

통독과정연구 94-Ⅳ

독일 통일 백서



통 일 원

-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작성·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독일정부는 통독4주년을 맞아 구 동독이 남겨놓은 잔재와 독일통일과정, 통일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 실현과정,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재건현황 등을 크게 9개분야로 나누어 집대성한 공식보고서인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aendern)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본 책자에는 이 보고서가 전문 번역되어 수록되었으며, 관련 통계가 부록(독어원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독일통일과 남북한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책을 내면서

통일 네들을 맞은 독일은 안으로 내적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한편, 밖으로는 유럽과 세계 무대에서 인류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역할과 책임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후 4년동안 독일정부와 국민들은 생활근거가 구 동·서독 어느 쪽인가를 불문하고 통일 당시에 예상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일과정과 통일후의 정책을 둘러싸고 가부에 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통일 당시에 가졌던 환희와 벅찬 기대에 비하여 실망을 갖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낙후된 산업에서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40년간의 공산주의 독재체제와 부실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고, 이를 치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독 네들을 맞게 되는 오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제도적 통합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구동독지역에 그동안 기울었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독일의 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가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독일 정부와 국민은 차츰 자신감을 더하고 미래에 대한 더욱 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독일 정부는 이러한 구동독이 남겨 놓은 잔재와 독일 통일 과정, 통일 후 각 분야에서의 통합 실현과정, 신연방주(구동독지역)의 재건현황 등을 집대성한 공식보고서로서, 「독일 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단시절 서독정부는 1968년부터 1989년까지 동서독의 생활 실태, 내독간 교류·협력, 동독의 경제·정치·사회·문화적 상황 등 「분단독일의 민족현

황」을 매년 연방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헐적으로(5차례) 민족
현황 보고서와 함께 방대한 특별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연방수상실의 주관하에 독일정부 전 부처의 통독관련 실무자들이 참여하
여 작성한 이번 자료집은, '89년 동독 붕괴시부터 '93년 7월 말까지의 독일
통일 과정과 내적통합의 실현 및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독일 정부의
제반 조치 및 그 성과를, 크게 9개 분야로 나누어 각종 실증적인 통계를 제
시하며 상세하게 기술한 방대한 책자입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4년여동안 독일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을 착
실하게 수집·분석하는 한편,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등 7권의 자료집
을 이미 편찬한 바 있는 주독대사관은 동 자료집을 전문 번역하여 「독일
통일 백서」라는 이름으로 여덟번째의 통일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자유와 민주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일은 우리민족의 숙
원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는 독일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많습니다만, 과거 동독의 상황과 독일 통일의 과정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우리의 통일 준비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큰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
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 정부의 관련 부서의 통일정책 수립에는 물론이
거니와 연구기관, 학자와 전문가 여러분들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
니다.

1994. 10. 3

주 독 대 사

金太禧

目 次

책을 내면서	i
제 1 장 독일 통일 과정	1
1. 서 론	1
2. 이주민 사태	3
3. 시민봉기	4
4. 자유선거	9
5. 화폐·경제·사회 통합 및 통일조약	10
6. 통독의 외교적 측면	13
7. 구동독의 현실	15
8. 신연방주 재건 개관	20
제 2 장 외교·안보 정책	25
I. 통일과정의 외교·안보 정책적 측면	25
1. 독일의 주권 회복	25
2. 신연방주의 EC 조약 및 EC 정책에의 편입	27
3. 독일과 인접국가들간의 조약관계 재편	27
4. 독일내 서방군대 주둔 문제의 재조정	28
5. 독일내 소련군의 주둔 및 철수 문제의 조정	28
6. 철군을 위한 재정적 보장	29
7. 소련군의 동독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30
8.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	31
9. 외교망의 확충	32
II. 통일과정의 연방군	33
1. 통일 이전의 상황	33
2. 동독 인민군의 해체	34

3. 신연방주에의 연방군 신설	38
제 3 장 국가·헌법·행정·사법	47
I. 국가와 헌법	47
1. 구동독 사회주의체제하의 헌법과 기본권	47
2. 기본법의 발효, 경과규정과 예외규정: 통일에 따른 기본법 개정 ..	49
3. 독일통일과 관련된 헌법 개정(통일조약 제5조)	50
4. 합동 헌법위원회	51
II. 신연방주의 형성	52
1. 신연방주의 형성	52
2. 재 편	53
3. 신연방주의 헌법	54
III. 수도와 국가기관 소재지	55
1. 통일조약의 규정	56
2. 입법기관의 결정사항	56
3. 연방정부의 결정사항	56
4. 연방주의 위원회	57
IV. 신연방주의 행정체계 구축	58
1. 통일 이전의 상황	58
2. 연방행정체계 구축	58
2.1 연방재산 관리행정	58
2.2 관세행정	60
2.3 수운 및 해운 행정	61

3.	주 행정체계의 구축	61
3.1	통일 이전의 상황 및 발전	61
3.2	조세행정	62
4.	기관의 통·폐합	64
V. 법치주의 사법의 확충		64
1.	1989년말 이전의 상황	64
1.1	맑스·레닌주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에 따른 사법의 기능	64
1.2	법원의 관할조직	65
1.3	법관과 검사의 수	66
1.4	법조인 교육	66
1.5	사법보조관(Rechtspfleger)	67
1.6	변호사	67
1.7	부수 법률사무	68
1.8	법원조직법과 소송법	68
1.9	행형	68
2.	제반 법상황의 발전	69
2.1	통독이전의 제반 법상황의 발전	69
2.2	통일조약	71
2.3	통일이후의 제반 법상황의 발전	74
3.	1989년 가을부터 통일시까지 사법분야의 변화	75
3.1	사법제도의 변형	75
3.2	변호사와 국가공증인들의 증가	76
3.3	형사판결 재심위원회	76
3.4	인적지원	77
3.5	보충교육	77
3.6	비송사안	77
4.	통일이후의 신연방주 사법 발전	78

4.1	접수사건의 증가	78
4.2	주 사법행정의 재건과 자매결연	79
4.3	협력과 경험의 상호교환	79
4.4	판사와 검사	80
4.5	사법보조관과 기타 고급 공무원	81
4.6	기타 사법종사원	81
4.7	구동독출신 사법종사원의 보충교육	82
4.8	변호사와 공증인	82
4.9	비송사안	82
4.10	강제집행/파산	83
4.11	사법통계	83
4.12	행형	83
5.	기타사항	84
5.1	연구프로그램	84
5.2	“동독의 사법제도” 전시회	84
5.3	주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구동독 법률의 문구확정과 수정	85
6.	총평과 전망	85
VI.	공직근무	87
1.	통일 이전의 상황	87
2.	공공행정 구조의 인수	88
3.	직업공무원 제도의 도입	88
3.1	공무원법의 발전	88
3.2	공무원 신분에 관한 근거	90
4.	공직근무자의 법적지위	91
4.1	기존 근로조건에의 지속 및 종료	91
4.2	고용조건에의 평준화	93

4.3	특별 원호제도	94
VII.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94
1.	서 문	94
2.	행정지원 기구	95
2.1	연방-주 조직정비처	95
2.2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력 알선	95
2.3	신연방주 재건단	96
2.4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96
2.5	지방자치행정을 위한 정보안내	96
3.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지원	97
4.	행정인력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	99
5.	특수행정 구축	99
5.1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귀속	99
5.2	재산관리관청의 설립	100
5.3	측량 및 등기제도	101
5.4	환경보호 행정	101
6.	교육훈련 및 연수에 대한 지원	102
VIII. 국내치안		103
1.	통일 이전의 상황	103
2.	통일조약에 따른 기구의 재편	104
3.	신연방주 경찰의 구축 및 연방정부의 지원	104
4.	신연방주에의 연방국경수비대 창설 및 편입	106
5.	주헌법보호청의 설립	108
6.	민방위 및 재난보호체계의 구축	109

IX. 정치교육	109
X. 통계 행정체계의 구축	111
제 4 장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113
I. 통일의 형법적 측면	113
1. 구동독 형법	113
2. 제반 법적상황의 발전	114
2.1 통일 이전의 상황	114
2.2 통일조약	115
2.3 통일이후의 제반 법적상황의 발전	117
II. 구동독 불법행위의 형법적 청산과 통일관련 범죄	120
1. 정권적 범죄행위	123
2. 국가보위부(Stasi) 요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125
3. 통일관련 범죄	126
III. 복권을 통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불법행위 청산	128
1. 형법상의 복권	130
1.1 통일이전의 상황	131
1.2 형사복권법의 주요내용	134
2. 직업상의 복권	136
2.1 통일이전의 상황	136
2.2 직업적 복권법 정부법안의 기본원칙	138
3. 행정법상의 복권	140

3.1	통일이전의 상황	140
3.2	행정법상의 복권에 관한 정부법안의 기본원칙	144

IV.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 145

1.	통일 이전의 상황	145
2.	재산법	146
3.	보상법	151
3.1	법적 근거 및 목적	151
3.2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준	151
3.3	정치권의 준비 및 정부안 작성	152
3.4	법률안의 기본 개념	153
3.5	보상금 및 조정금의 재원 조달	154

V. 구동독 국가보위부 자료에 관한 법률 154

1.	정치적인 목적	154
2.	통일조약의 규정들	155
3.	국가보위부 자료법의 주요내용	155
4.	연방 국가보위부 자료전담관	157

제 5 장 경제·사회·환경 통일의 달성 159

I. 통일 이전의 상황 :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 159

1.	80년대 동독경제의 위기적 상황	159
2.	낮은 노동생산성 및 고도의 잠재실업	160
3.	일방적인 대외무역정책과 불충분한 국제경쟁력	162
4.	주민들의 공급상황 악화 및 개별계층의 불이익	164
5.	민간기업활동의 폐지 및 경제구조의 중앙집중화	165
6.	능률저해적 임금제도 및 왜곡된 가격구조	167

7.	노후한 자본 스톡 및 불충분한 구조개혁	168
8.	심각한 환경훼손 및 환경오염	169
9.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및 주택정책의 실패	171
10.	1990년 당시 동·서독간의 상이한 상황	174

II.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1.	인간을 위한 대개혁	175
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177
2.1	화폐통합	177
2.1.1	통화정책적인 협력의 시작 : 여행외환기금	177
2.1.2	단계적 해결방안 대신 신속한 마르크화 도입	179
2.1.3	교환율의 문제	179
2.1.4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 채무청산기금, 구매무변제기금	183
2.1.5	동독 화폐제도와 은행제도의 구조 변경	185
2.1.6	화폐통합에 따른 제 경험	189
2.2	경제통합	191
2.2.1	단일한 경제질서의 도입	191
2.2.2	계획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혼합 배제	193
2.2.3	경제통합의 일부로서의 환경통합	195
2.2.4	국가재정상의 변경사항	195
2.2.5	법질서, 행정조직, 사법조직의 전면적 적용	196
2.2.6	경제를 위한 보조정책	196
2.3	사회통합	197
2.3.1	임금협상의 자율성 및 노동쟁의법	198
2.3.2	기업현장 및 기업의 공동결정	198
2.3.3	해고보호 및 노동보호	199
2.3.4	세분화된 사회보장제도	200
2.3.5	실업보험 및 고용촉진	201
2.3.6	연금보험	202

2.3.7	의료보험	203
2.3.8	상해보험	203
2.3.9	사회부조	204
3.	시장경제적 소유권제도의 부활	205
3.1	통일 이전의 상황	205
3.2	주요 규정	206
3.2.1	과거 인민공유재산의 귀속	207
3.2.2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	208
3.2.3	투자우선	209
3.2.4	물권법의 개정	211
3.2.5	채권청산 - 계약의 유예	212
3.2.6	토지등기부 제도	213
3.2.7	측량제도	215
III.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조달	217
1.	공공재정 이전의 전개과정 및 구성	217
1.1	구동독지역에 대한 공공재정 이전	217
1.2	독일통일기금	219
1.3	유럽공동체	220
1.4	사회보장비 지출	221
2.	구부채의 처리	222
3.	1995년까지 이전 재원의 조달	224
4.	연방국가식 재정균형을 위한 조정	225
IV.	경제통합의 과정	228
1.	신연방주 전체경제의 발전 현황	228

1.1	국내총생산의 발전	228
1.2	수요와 생산간의 격차	229
1.3	주민의 소득 현황	230
2.	“동독부흥” 전략	231
2.1	경제정책적 도전	231
2.2	구동독 부흥을 위한 공동대응책	233
2.3	민간투자의 장려	233
2.3.1	주요 장려조치	234
2.3.2	지원의 효과	235
2.3.3	투자 장려의 지속	236
2.4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238
2.5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240
2.6	구동독 기업의 판로 지원	242
2.7	노동시장정책 및 지역정책을 통한 지원	243
2.8	독일 전체 경제의 역동성 회복	244
3.	신탁청에 의한 기업의 민영화 및 정비	244
4.	구동독지역 산업의 혁신	251
4.1	통일 이전의 상황	251
4.2	1990년 이후의 발전	252
4.3	동독산업의 문제점과 전망	254
5.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256
5.1	통일 이전의 상황	256
5.2	1990년 이후의 발전	257
5.3	지원조치	258
5.4	민영화 및 재민영화	258
5.5	각 산업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	259
5.5.1	수공업	259
5.5.2	공업부문의 중소기업	260
5.5.3	서비스업	261

5.5.4	판매업	261
5.5.5	관광업	262
5.5.6	자유업	263
6.	산업부문의 연구, 개발 및 혁신	264
6.1	통일 이전의 상황 및 발전	264
6.2	연방정부에 의한 지원	265
7.	구동독지역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 및 확충	268
7.1	구동독지역 에너지산업의 구조	268
7.2	구동독 갈탄산업의 발전	269
7.3	전력공급 및 지역난방 공급	271
7.4	가스공급	272
7.5	석유산업	274
8.	구동독지역 주택부문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적 혁신	275
8.1	1989/1990년 당시의 상황	275
8.1.1	주택현황	275
8.1.2	소유권 관계 및 재원조달	278
8.1.3	건설업의 구조	279
8.1.4	결정적인 오류들	280
8.2	사회적 주택경제의 발전	280
8.2.1	주택부문의 소유권 관계 확인	280
8.2.2	임대료 개혁	282
8.2.3	주택보조금의 도입 및 조정	283
8.2.4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택건설 장려	284
8.2.5	구채무 문제의 해결 및 주택기업의 투자력 강화	286
8.2.6	주택 민영화	288
8.2.7	주택난의 해소	290
8.2.8	주택정책을 위한 통계적 기초	290
8.3	중간결산 및 중기적 전망	290
8.4	건설부문의 구조조정	291
8.4.1	시장경제적 하청제도의 도입	291

8.4.2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유해물질 방출 감소	292
9.	구동독지역 농업의 구조조정	294
9.1	1989/1990년 당시의 상황	294
9.1.1	농업제도, 구조 및 종사자	294
9.1.2	농산물, 시장상황, 경제성	296
9.1.3	환경오염	298
9.1.4	1949년 이후의 토지개혁과 소유권 박탈의 잔재	299
9.2	1990년 이후의 농업발전	301
9.2.1	농업 정책의 목표	301
9.2.2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인 기초	302
9.2.3	구조변경	306
9.2.4	과거 인민공유 토지 및 기업의 민영화	308
9.3	연방정부의 대책	310
9.3.1	재산분류	310
9.3.2	소유권 관계의 재정비	310
9.3.3	재정 지원	311
9.3.4	구조조정 지원	312
9.3.5	구채무에 관한 규정	313
9.3.6	과거 인민공유 토지 및 기업의 매각	315
9.3.7	환경부문의 조치	317
9.4	신연방주에 대한 EC 농업개혁 관련 특별 규정	318
10.	대외경제 : COMECON에서 자유국제무역으로	319
10.1	화폐·경제·사회 통합 이후의 동독 대외경제의 발전	319
10.2	대외경제에 대한 지원	320
11.	신연방주의 EC에로의 통합	323
11.1	EC 규정의 적용	323
11.2	EC 구조조정 기금	324
11.3	EC 농업시장	325

V. 신연방주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327
1. 교통	327
1.1 1989년 당시의 상황	327
1.2 동·서독 경계선 개방 이후의 긴급조치	329
1.3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발전	331
1.3.1 투자정책	332
1.3.2 철도교통	334
1.3.3 연방 장거리 도로	335
1.3.4 수운교통 및 연방수로	337
1.3.5 공공여객 교통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	338
1.3.6 항공교통	340
1.3.7 해상교통	341
1.3.8 도로교통 및 도로교통안전	342
1.3.9 도로교통 관련업체	343
1.3.10 위험물 운송	345
1.3.11 교통분야의 연구	346
2. 우편 및 통신	346
2.1 통신	346
2.1.1 1989/1990년 당시의 상황	346
2.1.2 1990년 이후 통신망의 확충	348
2.1.2.1 디지털 오버레이망	348
2.1.2.2 독일 전화망의 단일화	350
2.1.2.3 전화가설 및 데이터 통신	351
2.1.2.4 공중전화	352
2.1.2.5 이동통신	353
2.1.2.6 라디오/TV 송신망	354
2.1.3 1993년도 확충목표	354
2.2 독일연방우편(Postdienst)	355
2.2.1 1989/1990년 당시의 상황	355
2.2.2 1990년 이후의 발전	357

2.2.3	상품 및 서비스	359
3.	현대적인 환경보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360
3.1	상수도	361
3.2	하수처리	363
3.3	쓰레기처리	364
3.4	민간경제에 의한 해결책	365
4.	도시건설 및 지역개발	367
4.1	신연방주의 도시건설 관련 혁신	367
4.1.1	통일 이전의 상황	367
4.1.2	도시건설 혁신의 법적 기초	367
4.1.3	도시건설 관련 조치	370
4.1.4	도시건설 관련 연구 및 자문	372
4.2	지역개발정책의 진로 설정	373
VI.	노동법 관련제도의 개편	376
1.	임금협약 자율권 및 근로조건	376
1.1	통일 이전의 상황	376
1.2	근로조건에 자율적 교섭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376
1.3	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에의 발전	378
2.	해고보호	379
3.	노동보호	380
4.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382
4.1	기업현장	382
4.2	기업의 공동결정	384
5.	노동시장의 발전	385
6.	노동시장정책과 실업보험을 통한 사회문제의 완화	386

VII.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390
1. 신연방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390
1.1 통일 이전의 상황	390
1.2 1990년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392
1.2.1 실업보험제도의 구축	392
1.2.2 연금보험제도의 구축	393
1.2.3 농민을 위한 노후지원대책	393
1.2.4 상해보험제도의 구축	394
1.2.5 의료보험제도의 구축	394
1.2.6 사회부조기관의 구축	394
2. 노후보장, 직업수행 불능시 및 취업 불능시의 보장	395
2.1 동·서독간 연금수령권 평준화를 위한 제1차 조치	395
2.2 연금법의 단일화	397
3. 질병 발생시의 보장	402
3.1 의료보험법의 전환	402
3.2 질병발생시의 생계 보장	404
4. 간병에 대한 보장	405
4.1 통일전 구동독에서의 간병대상자 상황	405
4.2 신연방주 간병대상자의 최근 실태	407
5. 상해보험제도	409
6. 전쟁희생자 원호대책	410
7. 사회부조	411
8. 보건제도의 개편	413
8.1 외래 의료서비스 및 치과 의료서비스	414

8.2	입원치료	418
8.3	정신병치료	420
8.4	의약품 공급	421
8.5	공공보건서비스	422
8.6	건강보호	423
9.	장애자의 재활 및 적응	424
9.1	의료 재활	425
9.2	장애자의 직업적응	426
9.3	중장애자 현황	428
10.	민간 사회복지사업 구조의 구축 및 자조단체의 구축 지원	429
VIII. 생태학적 생활조건의 단일화		431
1.	통일 이전의 상황	431
1.1	구동독의 환경 훼손	431
1.2	환경관리 소홀의 원인	436
2.	통일후 환경개선 현황	438
2.1	위험방지 : 인간과 환경의 보호	438
2.2	환경법의 도입	440
2.3	지속적 경기부양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환경정화	443
2.3.1	환경정화 및 개선 프로그램	443
2.3.2	갈탄 채광지역 정화를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	445
2.3.3	고용촉진조치에 의한 환경정화	449
2.3.4	현대적인 환경기술의 확충	451
2.4	자연적인 생활공간의 확보	452
2.5	오염정화의 효과	453
3.	폴란드, 체코와의 환경부문 협력	455

제 6 장 교육·학문·연구 457

I. 교육 457

1.	동독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457
2.	통일과정 진행시의 상황 및 긴급조치	459
3.	신연방주의 초중고교 제도의 발전	462
4.	직업상담	465
5.	직업교육	467
5.1	법적인 기초의 재구축, 지원조치	468
5.1.1	교육훈련대상 직업의 구조	469
5.1.2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470
5.1.3	여성	471
5.1.4	우수자 장학제도	471
5.1.5	장애자 지원	472
5.1.6	신연방주의 직업학교	473
5.1.7	기업공동 직업교육기관	474
5.1.8	직업교육 관련 인력의 학력인정 문제	476
5.1.9	경제계와 직업학교간의 기술전수 및 모델연구	477
5.2	구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자격중의 인정	478
5.3	직업 재교육의 장려	479
6.	평생교육	480
6.1	신연방주의 평생교육 입법	481
6.2	일반 평생교육 및 문화 평생교육	481
6.3	평생교육의 질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려책	482
6.4	시범계획	484
7.	교육촉진	484
7.1	연방교육촉진법에 따른 교육촉진	484
7.2	기업체의 직업훈련생을 위한 개인적 지원	486

8.	교육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및 교류	487
8.1	교류촉진과 국제협력에 대한 신연방주의 참여 ..	488
8.2	유럽공동체의 각종 대책	489

II. 대학과 학문

491

1.	구동독의 대학제도	491
2.	대학의 방향 전환	495
3.	대학개혁의 중간결산	497
4.	통일독일의 대학제도	502

III. 연구와 기술

503

1.	통일 이전의 상황	503
2.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연구정책	504
3.	통일조약 제38조에 따른 연구·기술정책의 시행	506
4.	결론	510

제 7 장 가정·여성·청소년·노인 정책

515

I. 가정의 실태 개선

515

1.	통일 이전의 상황	515
2.	가정에 대한 지원	516
2.1	경제적 상황	516
2.2	자녀양육비	517
2.3	자녀수당	517
2.4	생계비 보조	518
2.5	지원기금 및 연방재단	518
2.6	동독이 지급하던 지원금의 정리	519

3.	가정 지원사업의 촉진	520
3.1	가정 지원단체의 구축	520
3.2	임신 상담망의 구축	521
3.3	가정상담 및 가정교육 지원	521
3.4	가정센터	521
3.5	가족 휴식처 제공 및 상봉 주선	522
3.6	산모 요양제도의 구축	523

II. 경제적·사회적 변화속의 여성 524

1.	통일 이전의 상황	524
2.	여성의 직장생활	526
2.1	노동시장정책적 조치	527
2.2	상담제공	528
3.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	528
3.1	산모 보호	529
3.2	독신 양육자	529
3.3	탁아제도	529
3.4	노후보장	530
4.	사회속의 여성	530
4.1	여성단체의 구축	530
4.2	여성보호소의 설립	531
5.	전망	531

III. 사회적 변혁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 533

1.	통일 이전의 상황	533
----	-----------	-----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법률	535
3.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구조	536
4.	청소년, 홍보활동, 정책	537

IV. 노인을 위한 정책 540

1.	통일 이전의 상황	540
2.	노인 지원구조의 새로운 구축	542
3.	긴급지원	543
4.	양로원과 양로원법	544
5.	복지원 - 외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조직	546
6.	자율단체의 참여	547

V. 병역 대체 사회봉사 근무 548

제 8 장 문화 · 언론 · 스포츠 551

I. 문 화 551

1.	통일 이전의 상황	551
2.	통일조약 제35조에 따른 문화적 원형의 보존	552
2.1	원형보존 프로그램	554
2.2	문화간접시설 프로그램	554
2.3	기념물 보호 특별 프로그램	555
2.4	기타 문화지원	555
3.	범국가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의 지원	556
3.1	베를린	556
3.2	신연방주	558
4.	도서관, 문서보관소, 문화재 반환	560
4.1	도서관	561
4.2	문서보관소	562

4.3	문화재 반환	563
5.	교회를 위한 연방정부의 특별지원	563
6.	동부 및 동남부 유럽 소재 독일 문화유산의 보존	564
7.	원형보존 및 구조변경	565
7.1	문화와 연방국가	565
7.2	조직의 개편	566
7.3	협력과 경쟁	566
8.	결론	568
II. 언 론		569
1.	통일독일의 방송체제 개편	569
2.	구동독지역의 인쇄매체 발전	571
2.1	일간지	571
2.2	잡지시장	572
2.3	신문보급	572
III. 스포츠		573
1.	통일 이전의 상황	573
2.	일반 체육	574
3.	장애자 체육	575
4.	선수 체육	576
제 9 장 독일의 국제적 역할		577
I. 유럽 평화질서의 구축		577

1.	NATO·북대서양협력회의	577
2.	CSCE의 제도적 확충	578
3.	유럽연합(EU)	581
4.	유럽공동체의 확장	583
II. 통일독일의 책임 증대		584
1.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독일	584
2.	중동부 유럽의 안정을 위한 지원	586
3.	동구권 거주 독일인을 위한 지원	591
4.	개도국 지원정책 협력	592
5.	유럽차원에서 망명비호권 일원화	595
6.	독일과 UN	597
7.	분쟁지역 관리에의 참여	598

도 표

표1.	구동독지역에 대한 공공 재정이전(사회보장비 포함)	218
표2.	“통일기금”의 연도별 지출내역(1990~1994)	220
표3.	각 신연방주에 대한 “통일기금” 연도별 지출 내역	221
표4.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재정 이전	223
표5.	1989~1992년간 연방 및 공공부문 재정적자	225
표6.	1990년이후 사회복지주택 건설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	285
표7.	45년간 보험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 비교	400
표8.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개업한 의료보험의 및 (관공서, 제 기관 과의) 계약의사의 수	416
표9.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개업한 의료보험 치과의 및 (관공서, 제 기관과의) 계약 치과의사의 수	416
표10.	사회복지법전 제V권(SGB V) 제311조에 근거한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외래병원시설 및 의사의 수	417
표11.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개업한 의료보험의 및 계약의사의 밀도	418
표12.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병원수	419

제 1 장 독일 통일 과정

1. 서론

1990년 10월 3일, 전 독일국민은 40여년의 고통스런 분단을 겪은 후 자유스런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국가통일을 달성하고 1949년 기본법이 우리 독일민족에게 부여한 통일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동독인들의 용맹스런 결단은 1989년 가을, 단 몇주일만에 구동독 공산당의 권력과 그 억압장치를 궤멸시켰다. 이는 오로지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에서 일어난 봉기와 비교할 때 국제여건이 극적으로 호전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동독인들은 서독이 통일에의 갈망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독일인들의 자결권을 촉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게다가 헬무트 콜 수상이 영도하는 연방정부는 국내정치적 반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 일순간만이라도 정책상의 혼란에 빠져들지 않았다.

콜 수상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전제조건은 서독이 EC 회원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대서양 동맹체제인 NATO에 공고하게 정착했다는 점이었다. 독일의 외교·안보·유럽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은 우리의 모든 인접국과 우방국들로 하여금 독일 통일을 불가피한 사실로서 수용토록 하는 국제적인 신뢰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1983년,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NATO의 이중결정(Doppelbeschluss)이 관철되자 NATO의 단호한 행동능력이 과시되었으며, 소련의 정치적 주도권 추구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NATO와 연방정부의 정책은 결국,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유럽의 한 부분에서 개혁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고르바초프가 주도하는 소련의 개혁선례를 받아 들이지 못한 구동독 공산당의 무능, 풍전등화상태의 경제적 파탄,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산업과 주

택 등에 걸친 물질적 생활근거의 처절한 마모현상, 자료와 통계의 조직적 조작과 같은 문제점의 공공연한 은폐, 정치적 이단자에 대한 박해, 일체의 변화에 대한 거부 등은 동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과 미래에의 전망을 박탈해 버렸다. 그들은 1989년 가을, 대대적인 집단탈출과 비폭력 항의 시위와 함께 구동독 공산독재를 거부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출하면서 공산정권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았다.

독일은 Berlin 장벽이 무너진지 불과 11개월만에 4대 전승국이 동의하고 인접국과 세계의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에 부쉬 대통령 영도하의 미국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소련의 변화, 그리고 동유럽과 중유럽 여러 국가의 변혁은 통일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외교정책적 전제조건을 마련했다.

독일의 국가통일 달성과 더불어 획기적인 제1단계 통일이 달성되었으며, 현재 내적 통일의 완성이 그 제2단계가 되었다. 이러한 과제는 역사상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 40년 이상 분단되었던 국가 중, 국가통일의 달성과 더불어 사회주의적 경제·사회체제로부터 자유와 사회복지적 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로 변화되는 과정이 동시에 시작된 국가는 일찌기 없었다. 장기간에 걸친 구동독 공산당의 탄압통치가 공공분야와 사생활 영역에 남겨 놓은 상처는 매우 깊다. 그 상처의 대부분은 단지 서서히 치유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탄압, 경제적 실패, 생태학적 착취 등 감시국가의 심각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장기간에 걸쳐 연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3년 동안 신연방주에 이미 구축된 민주주의 제도와 공공 행정이 그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법치국가적 사법체계의 확충, 사회적 시장경제의 실현, 경제질서의 전환에 따르는 사회문제의 해결, 교육제도의 개편, 환경상태의 개선, 구동독 공산당 독재정치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이 - 비록 주요 현안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 통일독일의 정치적 핵심과제이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공동체적 책임감을 갖고 극복해야 한다.

2. 이주민 사태

동독이 건국된 지 40년이 된 1989년 여름, 당시 동구국가에서의 변혁을 배경으로 중유럽, 동유럽, 동남유럽의 전후 지도가 단 몇개월만에 원천적으로 변해버린 일대과정이 시작되었다.

소련 지도층은 더 이상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위성국가들로 하여금 “독자노선”을 걷도록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소련에서의 자유화는 이미 동구권내에서 국내정치적 개혁의 선두주자였던 폴란드와 헝가리로 하여금 정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였다. 1989년 8월 폴란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는 처음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마조비에츠키를 정부수반으로 선출하였다. 헝가리에서는 이미 카다르 정권하에서 정치체제의 개방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쇠퇴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정권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1989년 여름부터 동베를린,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주재 서독공판에는 대규모 피난민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9월 11일 헝가리 정부는 몰려 든 동독 난민들을 위해 동독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서방 국경을 최초로 개방하였다. 연방정부는 프라하와 바르샤바 주재 서독 공판으로 몰려 든 동독 난민들이 서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 연방정부가 수년전부터 동독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 서독내의 강요 역시 적지 않았지만 - 동독의 고유국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²⁾

1983년까지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온 이주민 수는 매년 약 14,600명에 달했다. 그 다음 해부터 이주민 수는 계속 증가했는데 1984년과 1988년에는 각각 약 40,000명에 이르는 절정에 달했다. 1989년에 이주민 수는 급증하여 343,854명의 이주민이 수용절차를 밟았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급증에 대처하고자 이주민 수용시설의 공간적·인적 확장이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로 온 이주민 중 대다수는 독일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천막에서 최초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별열차가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주재 독일대사관으로부터 이주민을 싣고 서독으로 왔다. Gießen과 Berlin 소재 연방수용소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동산과 인력을 동원하여 수많은 긴급수용소를 마련해 놓았으며, 이주민들은 이곳을 거쳐 서독의 각 주로 수용되었다. 동독에서 온 독일인들은 서독의 동포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수만여명이 동독을 떠나버리는 가운데 동독내에서는 갈수록 많은 야당단체와 시민운동단체가 공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0월 2일 Leipzig 에서 처음으로 20,000명이 불법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시위에 돌입했다.

3. 시민 봉기

1989년 동독이 겪은 구체적인 정치적 경험은 대규모 이주사태에 대한 체념상태와 증가일로인 야당운동과 더불어 공고해진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동년 6월 중국의 민주화운동은 유희과 함께 진압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해 동독정권은 대대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 몇 주일 전인 1989년 5월 동독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대대적인 선거부정이 감행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민운동단체는 공개적으로 항의하였다.

1989년 6월 민권운동가들이 선거부정에 관한 자료를 동독 국가평의회에 제출하려 하자, 이들 중 120명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선거에 대한 요구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문제가 되었다. 이미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다른 국가들은 소련의 개혁노선에 따라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반대로 동독은 최소한의 개혁의지마저 거부하였다.

눈에 드러나고 있는 동독의 멸망상태는 신뢰감의 부재상태 및 절망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이자 국가평의회 의장인 호네커는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일 바로 전날 동베를린에서 동독이 서기 2000년의 문턱을 틀림없이 넘을 것이며, “미래는 사회주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소련의 국가 주석이자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호네커에게 “너무 늦게 오는 자에게는 인생의 천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한 경고는 아무런 반항없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1989년 10월 2일 Leipzig 에서 시위에 돌입했던 군중 20,000명은 불과 몇 주일이 지나자 벌써 70,000명에 육박했다. 그 이래 Leipzig “월요 시위”는 매주마다 수십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혁과 민주주의 혁신을 요구했으며 “우리가 국민이다!”는 구호도 등장하게 되었다. 동독 공산정권은 이와 같은 군중시위에 지도층교체로 대처하려 하였다.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가 실각되었으며 그 후임 공산당 서기장에 정치국원 에곤 크렌츠가 취임했다. 그러나 크렌츠의 목표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조심스런 개혁, 즉 이와 더불어 통치체제의 보존이었다. 그때부터 40여년간 불요부동하던 구동독 공산당의 권력은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다. 40주년 건국기념행사에서 지도층이 “유럽의 평화와 사회주의의 전초기지”로 칭송하던 동독은 그 존립기간 전체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동독은 국민의 절대 다수에 의해 거부되고, 모든 생활 영역에 걸친 전체적 조종과 통제, 장벽과 철조망 덕분에 겨우 생존이 가능할뿐인 불법국가이자 자유가 없는 나라였던 것이다.

개혁을 외치던 Leipzig 시위는 동독의 다른 도시에서도 성토데모가 벌어지게 한 기폭제였다. 1989년 11월 4일 동 Berlin에서는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통치체제에 반기를 들고 시위에 돌입했다. 그 며칠 후 집권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새로운 여행법을 둘러싼 격돌은 마침내 11월 7일 내각의 사퇴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정치국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인 1989년 11월 9일, 드디어 극적인 절정이 도래하였다.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드디어 구동독 공산당은 수십여년간 거절해오던 거주이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주일 동안 900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베를린을 비롯한 서독지역으로 여행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국민의 대규모 시위는 동독 공산정권의 주요 이데올로기 맹방이던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체제의 멸망도 가져왔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일어난 변혁은 전 유럽의 마르크스·레닌주의식 전체주의의 멸망을 기정사실화 해 버렸다.

1989년 11월 13일 동독 인민의회는 Hans Modrow를 각료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모드로 정부 역시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모드로는 동독의 극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그의 제1차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선포했다. 그는 (서독)연방정부에게 방대한 “조약공동체”를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동독인들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시위는 계속되었다.

폴 수상이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였다. 그는 1989년 11월 28일 연방의회에

서 독일통일을 위한 10개항을 개진하였다. 콜 수상은 독일통일과정이 유럽 전체의 발전과정에 입각해야 할 필연성을 강조하였고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독일통일이라는 목표를 거론했다. 그는 “독일의 국가적 통일 달성”이 그가 이끄는 정부의 정치적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외에서는 이 사실이 예상의 경이로서 받아들여졌고 국제적 반응은 당분간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콜 수상은 역사적 발전을 배경으로 한 이 연설을 통해 독일 통일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던 바, 이는 곧 그 후에 바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동독에서는 모드로 정부하에서 권력이 공산당에서 국가차원으로 넘어갔다. 구동독 공산당의 권위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신임 당수 크렌츠는 단 수주일만에 당직과 관직 일체를 상실해 버렸다. 구동독 공산당의 당명은 과거의 오명때문에 당분간 사라졌다가 결국 “민주사회주의당”(PDS)이라 개칭 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였다. “원탁회의”가 대화의 광장이 되었는데 동독의 정부시책에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과거 “동독 인민전선”에 합류했던 정당들이 원탁회의를 중심으로 구동독 공산당의 후신 민사당과 결별하고 독자적 노선을 구축하기에 진력하였다. 마침내 1990년 5월 6일 인민의회구성을 위한 자유·비밀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1989년 12월 5일 연방수상실 장관 루돌프 자이터스는 모드로 동독 수상과 베를린에서 만나 콜 수상의 드레스덴 방문 준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무엇보다 긴급한 사안인 여행교통에 관한 대대적인 합의가 달성되었다. 즉 그것은 여행기금의 설치, 동독 방문시 강요되던 사증제도의 철폐, 동독 방문시의 최소의무환전제도와 같은 것들이었다. 이로써 45년만에 독일에는 마침내 완전한 여행의 자유가 다시금 부활되었다.

바야흐로 동독 전역에 걸쳐 연일 군중시위가 뒤따랐다. 독일통일이라는 주제가 점차적으로 전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콜 수상이 1989년 12월 19일과 20일 드레스덴을 방문하자, 수만명의 군중이 폐허가 된 Frauenkirche 교회 앞에서 연설하는 콜 수상을 환호해 마지 않았다.

콜 수상은 연방의회에서 10개항의 통일방안을 개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분단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단력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들이 지난 1989년 12월 22일 콜 수상은 Brandenburg 문의 개방식에 참석하였는데 이는 아직 분단상태인 한 국가에게 고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모드로 정부는 아무런 효율적 방안없이 반신반의하면서 동독의 긴급한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수십년동안 모든 생활영역을 장악하고 있던 감시기구인 국가보위부(Stasi)의 해체에 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국가보위부는 동독인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동독의 경제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1990년 1월 들어 출국자의 수는 또 다시 증가하였다. 그때 동독인들은 “통일조국 독일”(Deutschland, einig Vaterland),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 라는 구호와 함께 독일통일을 외치면서 거리로 뛰어나왔다.

1990년 2월 초 동독정부는 정면돌파를 시도하였다. 동독정부는 2월 5일 야당 지도자를 입각시켜 “민족책임정부”를 구성하고 “통일조국 독일”이라는 구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만들었다. 모드로는 모스크바를 방문, 소련 지도층과 회담을 마친 후 “독일식 연방국가(Konföderation)의 형태 또는 독일식 연방(Bund)의 형태”라 할 중립식 국가형태의 중간단계를 하나의 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 역시 사태진전때문에 사장되어 버렸다. 콜 수상이 쟈서 외무장관과 함께 1990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소련을 방문하였을 때 독일측과 소련측은 독일인들이 국가통일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

한 콜 수상의 발의에 합의하였다. 독일통일문제 중에는 과연 독일인들이 어떠한 국가형태와 어떠한 속도와 어떤 기간내에 통일을 실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동시에 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 보장으로 서 가장 중요한 사안인 2 + 4 회담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4. 자유선거

처음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인민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 총선거는 그 선거일을 앞당겨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93.39%라는 높은 투표율과 함께 독일 의회사에 길이 남게 되었다. 또한 이 선거야말로 동독인들에게는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실시된 최초의 자유선거이자 민주선거였다. 기민당(CDU)은 독일사회동맹 (DSU)과 민주약진당과 함께 “독일동맹” (Allianz für Deutschland)으로 연합하여 선거전에 임했다. 기민당은 40.59%로 최다 득표정당이 되었으며, 사민당 (SPD)이 21.76%, 민사당 (PDS)이 16.32%, 독일사회동맹 (DSU)이 6.2%, 자유민주연맹 (Bund Freier Demokraten)이 5.28%, 민주약진당 (Demokratischer Aufbruch)이 0.93%의 지지를 받았다. 이 선거의 결과, “독일동맹”은 투표자의 약 절반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곧 콜 수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출한 것이었다. 우선 동독 유권자들은 콜 수상의 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기민당, 사민당, 독일사회동맹, 민주약진당은 동독기민당 당수이자 신임수상인 드메지어 (Lothar de Maiziere)가 이끄는 대연립내각 구성에 돌입하였다. 1990년 4월 12일에 실시된 연립내각구성 합의에서 집권여당은 “기본법 제23조를 원칙으로 하는 독일통일에 관하여 서독과 협상한 후, 동독 전체를 위해 이를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실현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때부터 서독으로 넘어오는 동독 이주민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1990년 1월과 2월 중 연방긴급수용소는 각각 58,043명과 58,999명의 이주민을 집계했던 반면, 인민의회 구성 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의 2주 동안 각각 10,731명과 11,914명의 이주민이 긴급수용소에서 신고절차를 마쳤다. 인민의회 선거가 끝난 다음 주, 드디어 이주민 수는 4,990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주민 수는 그 후 계속 줄어들었다.

동독의 신정부와 더불어 독일통일이 실현될 전망이 보이자, 동독인들은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을 고향에 안주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긴급수용절차가 종료된 1990년 7월 1일까지 1990년 중 동독을 떠난 이주민 수는 총 190,190명이었다. 이주민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도 서독에서 새로운 안주지를 모색할수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총 249,272명이 1990년 중에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이주한 셈이다.

드메지어 정부와 콜 정부는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미 2월 중에 콜 수상은 모드로 수상의 서독 방문을 기해 동독이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동독정부가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조건하에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 1990년 4월 24일 콜 수상과 드메지어 수상은 1990년 7월 1일에 발효하게 될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합의하였다.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이 Bonn에서 양국 정부수반이 임석한 가운데 연방재무장관 Theo Waigel (CSU)과 동독재무장관 Walter Romberg (SPD)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국가조약이라는 장치와 더불어 독일통일 달성을 위한 최초의 國法的 의의가 있는 한 단계가 완료되었다.

5. 화폐·경제·사회 통합 및 통일 조약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동독인들에게는 생활조건을 획기

적으로 개선할 절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화폐·경제·사회 통합과 함께 이미 국가적 통일이 달성되기 전에 독일전역에 걸친 균일한 생활조건의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다. 서독 마르크의 도입은 단순한 희망의 신호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화폐교환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독일인들의 연대의식이 무한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국가조약과 더불어 사회·경제·환경분야에 걸친 평준화를 향한 거보를 내디디었다. 국가조약은 화폐통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며, 경제통합의 원칙하에 사회적 시장경제가 동독지역에 도입되도록 하였고, 능률 본위의 정당성과 사회적 평준화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창출되도록 하였다.

그 후 몇주일 동안 서독에서는 국가조약의 세부사항에 관한 정치적 논란이 뒤따랐다. 그러나 1990년 6월, 국가조약은 여야간의 대화를 통하여 동·서독의회의 절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이 발효된 직후, 그리고 1990년 7월 22일 인민의회가 1952년 구동독 공산당에 의해 해체된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Anhalt, Brandenburg, Thüringen, Sachsen 주를 부활하기 이전인 1990년 7월 4일 베를린에서는 통일조약에 관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미 회담 벽두에 통일조약의 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합의가 이룩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연방의회와 각 주의회의 여야 대표들이 회담 초기부터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은 것은 통일조약이 동·서독 입법기관으로부터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과 단순법률적 경과규정에 관한 입법화와 함께 헌법상의 통일 관련 모든 규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역사적 차원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통일조약 협상과정에서 동·서독 회담대표인 쇼이블레 연방내무장관과

동독정무차관 Günther Krause는 Berlin에서 최초의 전독 연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2월로 예정된 연방의회 의원선거가 단일화된 선거권을 근거로 하여 실시될 수 있었다.

기본법에 적법한 동·서독 통일의 법적근거에 관한 문제는 개정이전 기본법 제23조에 입각한 “條約式” 가입방안 (Beitrittslösung)을 채택하여 해결하기로 결정되었다.

화폐·경제·사회통합의 실현에 관한 조약의 전문에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국가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 1차적 의의가 있는 단계”라는 내용이 이미 명시되었으며, 이로써 동독이 채택키로 고려한 방법에 대한 사전 결정조치가 단행되었다.

1990년 8월 23일 동독 인민의회는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기본법 제 23조에 입각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적용영역으로 가입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동독의 경제·사회·정치구조가 악화일로에 놓인 가운데 신속한 결단이 내려지기를 원했던 주민들의 압력에 대해 의회는 이러한 결정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은 서독측의 연방내무장관 쇼이블레와 연방 수상실장관 자이터스에 의해 주도된 4차례의 회담 후 Unter den Linden 가에 있는 베를린 황태자 궁에서 연방내무장관 쇼이블레와 동독정무차관 크라우제에 의해 가서명되었다. 통일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독일통일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다. 각종 부속문서가 포함된 장장 1,000여면에 달하는 통일조약은 동독의 가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화해 놓은 것이다. 1990년 9월 20일 통일조약은 연방의회, 인민의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방상원에서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한 다수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6. 통독의 외교적 측면

이미 이 시점에 독일통일의 달성에 필요한 외교정책적 선결요건이 마련되었다.

연방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인 EC와 NATO의 일원으로서 불변한다는 사실과 독일통일은 유럽통일과정에 따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시종일관 의문을 제기한 바 없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1990년 2월 13일 캐나다 Ottawa의 “Open Sky” 회담의 별도회의에서 겐서 연방외무장관과 4대국 및 동독외무장관은 인접국가 관련문제를 포함한 독일 통일 달성을 위한 대외적 측면의 문제를 2 + 4 회담을 통해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

미해결상태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통일독일의 동맹체제 소속에 관한 소련측의 자세였다. 1990년 7월 15일과 16일에 걸쳐 콜 수상은 겐서 연방외무장관과 바이겔 연방재무장관과 함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와 코카서스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을 통해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통일독일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어느 동맹체제에 소속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는 사실이 합의되었다. 콜 수상은 연방정부의 견해에 따라 통일독일이 북대서양 동맹체제인 NATO의 일원으로 계속 잔류할 것임을 전연 의심치 않았다.

모스크바와 코카서스 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의 외교정책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길이 트이게 되었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서독, 동독의 외무장관들이 “독일 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 (2+4조약)에 서명하였다.

통일독일은 2+4 조약과 함께 국내외적인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였다. 동

조약은 통일독일의 국경의 최종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1994년 말까지 소련군이 독일로부터 철수할 것임을 규정해 놓았다. 이로써 독일의 국가적 통일달성에 필요한 선결요건이 완결되었다.

독일과 소련은 두 개의 조약을 통해 구동독지역 주둔 소련군 문제를 규정했는데, 이에는 1994년 말까지의 완전 철군 및 철군에 따르는 재정문제에 관한 세부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의 후임 엘친은 공동성명을 통해 1994년 8월 31일까지 조기에 철군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13일 드디어 겐서 연방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은 모든 분야에 걸친 공동협력 및 무력사용과 영토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방대한 양국간 조약에 가서명하였다. 이 “거대 조약”은 이미 콜 수상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전에 회담할 때 거론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1990년 11월 통일독일은 폴란드와 국경인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독일과 폴란드의 향후관계를 비롯한 기타 중요 사안에 관한 양국간 조약 역시 체결되었다. 1991년 6월, 우호·선린·협력에 관한 조약을 비롯하여 독일·폴란드 청소년 기구에 관한 협정 및 지역적 협력 및 국경인접지역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으며 독일-폴란드 환경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독일통일의 전야라 할 1990년 10월 1일과 2일 CSCE 35개 회원국의 외무 장관들은 New York 에서 회동하여, 독일의 국가적 통일 달성을 유럽의 통일과 자유를 향한 역사적 단계로서, 그리고 안정과 협력을 위한 중대한 기여로서 그 진가를 높이 평가했다. 1990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CSCE 회원국의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34명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의 외교정책적 변화에 따른 잠정적인 결정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의 무력사용 포기선언으로 냉전은 엄숙하게 종식되었으며, Wien에서 협상했던 유럽 재래식 군대에 관한 조약의 서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대륙의 재래식 무기체제에 관한 방대한 군축조치가 단행되었다.

모든 회원국들이 서명한 “신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을 통해 CSCE 국가수반과 정부수반들은 독일국민들이 유럽 안보·협력회의 최종선언의 제원칙에 의거하여 주변국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가운데 통일을 실현했음을 축하해마지 않았다.

나아가 CSCE 국가수반과 정부수반들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인권존중 그리고 시장경제를 관철할 것임을 표방하였다. 처음으로 이와 같은 개념들이 모든 국가수반과 정부수반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파리헌장은 유럽이 과거의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해방되고 민주주의, 평화, 통일의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며 45년간의 전후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7. 구동독의 현실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독일민주공화국의 기본법 적용영역에로의 가입이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베를린 제국의사당 건물 앞에 흑·적·황색의 독일국기가 나누끼는 가운데 수십만명의 인파가 참석한 통일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

독일통일은 “자유스런 자결권 행사와 더불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한다”는 1949년 기본법이 “독일국민 전체에게” 부여한 과제가 충족됨으로써 다시금 달성되었다.

공산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통일이 달성됨으로써 부자유와 불법, 국가에 의한 전횡이 사라졌다.

그 이래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적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다. 처음부터 순전히 물질적 사안에만 국한하면서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간과해 버렸던 구동독 공산당 통치시절보다

현재의 생활이 더 나아졌다는 사실은 오늘날 동독인 대부분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자명하게 되었다.

40년간의 구동독 공산독재를 겪은 동독인들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면서 평화스런 혁명으로 돌입하였다. 그것은 곧 대변혁예의 거대한 추진력이었다.

동독에서는 법률의 위반이 특수한 개별사안이 아니었고 만연된 다반사였다. 다른 독재체제와 마찬가지로 법이란 오로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판결과 법률은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데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이었다.

구동독 공산당의 불법행위는 40년간에 걸쳐 모든 생활영역에 만연되었다. 전체 공산통치 기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기본인권의 유보 내지는 침해였다.

- 진정한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없었다.
-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 편지 및 우편·전화의 비밀은 조직적으로 침해되었으며 주민들은 끊임없이 감시와 밀고상태에 처해 있었다.
- 지배 정권에 반대하는 여하한 야당행위라 할찌라도 억압되었다. 체제를 비판 하는 사람은 형사소추의 대상으로서 정신요양소로 보내졌거나 이주가 강요되었으며, 교육과 승진상의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배우자는 일자리를 잃어 버렸고 그 자녀들은 상급학교 내지 대학 진학으로부터 제외되었다. 동독정권은 이러한 방법으로 인간성과 생의 운명을 체계적으로 파멸시켰다.
-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었다. 통치자들은 장벽, 철조망, 조준사살을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을수 있는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했다. 3권분립은 체제자체에 의해 배제되었다. 국가와 법은 공산당의 통치수단이

었다. 국가기구와 사법계의 요직은 충직한 당간부들이 다 차지했다. 법관과 검사는 구동독 공산당의 수중에 있었다. 변호사 역시 당원들에 의해 독식되었으며 게다가 협회의 일원으로서 통제되었다. 중앙 집권적 명령경제체제는 진정한 계약체결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로지 동독의 Nomenklatura (지배계급)만이 온갖 특혜를 향유할 뿐이었다.

국가와 당에 의한 무한한 권력행사는 특히 교육제도에 가공할 정도로 관철되었는데 그 목표는 젊은이들에게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판단기준에 따라 분배되었기 때문에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와 같은 유산이 남겨놓은 골은 아주 깊다. 불법과 박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남겨둔 부담스런 유산의 실상이 과연 어떠했으며 구동독 공산정권이 남겨놓은 물질적 잔재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 전체적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동독은 이미 1989년 가을에 파산상태에 처해 있었다. 각 개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한 동독은 경제적으로 보아 독자적 국가로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구동독 경제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즉 1989년 9월 구동독 지도층이 내적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국가의 부채는 동독의 지불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모드로 정권이 1조 4,000억 동독 Mark로 추정한 동독 자산을 근거로 동독의 산업재산이 부채 정리에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신탁청 역시 그 업무개시 초기에 재산가를 수천억 마르크 정도로 계산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40년간의 사회주

의 부실경제는 막대한 부채의 산더미를 남겨 놓았는데, '구채무변제기금' 자체만도 약 4,000억 DM에 달한다.

지난날 인민공유로 되어있던 Kombinat로부터 분리된 기업의 대다수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단 그 원인은 사회주의 하에서는 능력발휘를 자극하는 경쟁이 무시되었고,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달성될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아가 외환조성이라는 유일한 목표설정에 따른 지나친 수출보조금 지원은 가식적인 수출초과를 의미할 뿐이었다.

기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재화의 대부분 역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동독의 생산시설은 완전한 낙후상태였던 것이 통례였으며 에너지 낭비가 극심했다. 따라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구서독 수준과 비교할 때 30%도 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현존 사회주의의 완전고용이란 단지 허울뿐이었다. 기실 거의 모든 기업체와 행정기관에는 잠재실업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잠재실업은 최소 140만명에 이르렀다. 동독의 공직자체만 하더라도 구서독 보다 2배가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약 30%인 300만명이 변화된 여건, 즉 시장경제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실직대상이라고 Ifo 경제연구소는 추산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 할 자기발의, 창의성, 경쟁력과 같은 것은 구동독 공산당 및 국가의 후견인 행세때문에 완전히 위축되었다. 신속한 재건의 장애요인인 막대한 재정결손상태는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 될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철도망, 도로망, 주택건설, 상수공급,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등에 걸쳐 산적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의한 주택정책과 임대정책은 건축물의 원형이 손상되도록 하였으며, 신축건물 분야의 결합투성이 싸구려 생산품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거의 구제불능상태의 주택상태를 야기시켰다.

이외에도 에너지 공급파이프가 사용불능상태일뿐 아니라 도시들에는 정화처리 시설이 없는데다가 전화와 통신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다.

비록 사회복지분야의 보험제도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 분야 역시 심각한 결함이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연금생활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이들이 받던 연금은 낮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추세에 따라 충분히 조정되지 못했다.

보건제도에는 2계급제도가 있었는데 서유럽 수준의 정상급 의료시설은 오로지 소수의 특권계급만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연환경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상태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생태학적 오염이 초래되었다. 구동독 정부는 1990년 3월에 작성된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통해 구동독 공산정권의 책임감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동독의 환경조건은 공기, 하천, 토양이 유해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로 점철되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조건은 인간의 건강을 해롭게 하며 국제적, 국가적 자연관리에 심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경제차원에 걸친 사전예방적 사고방식의 부재상태로 인하여 동독의 생산기초가 점차적으로 공동상태가 된 후, 결국 파괴되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오늘날 국가와 시민들은 이에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각종 문제때문에 신연방주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롭고 우수한 법치국가적 능률행정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사법기관 전반 - 및 공공생활의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 에 걸쳐 아직도 과거 국가보위부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8. 신연방주 재건 개관

40년에 걸친 실패일로의 사회주의 부실경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변화, 그리고 신연방주에서의 효율적인 경제 구축에는 1990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로지 열심히 일하고 인내심과 양보심을 발휘할 때에만 재건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달성된 결과로 볼 때 경제재건을 위해 착수된 방법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구동독 공산정권이 붕괴된 후에 드러난 경제, 사회, 환경문제에 비추어 볼 때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래로 착수되었거나 이미 달성된 성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 그리고 통일조약으로 연방정부는 아주 초기에 독일 전역에 걸친 경기부양과 풍요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 1990년 7월 1일 D-Mark 의 도입과 더불어 아직도 동독에 살고있던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계적 통화의 하나인 서독마르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1990년 5월 들어 다른 연방주와 함께 “독일통일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통일기금의 재원규모는 수차에 걸쳐 증액되었다. 1993년 3월 13일자 연대협약에 관한 합의점 모색과 더불어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통일기금에 의한 재정지원액은 총 1,607억 DM에 달하게 되었다. 1990년 중에만 해도 그 중 220억 DM이 신연방주로 유입되었다. 다양한 재원대책 중 핵심적 사안으로서 1991년과 1992년에 “구동독지역 부흥 공동대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임금협상 당사자, 업종별 단체, 사회단체에 의한 총 240억DM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방대한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연방주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었다. 그 중점사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고용창출조치, 개인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지원, 환경보호대책, 주택 건설과 도시 건설, 교통과 대학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구동독지역을 위한 공공재정이전 (사회보험 포함)의 규모는 구서독지역이 보여 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총력 경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이전규모는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데 (조세수입과 행정수입을 제외한) 신연방주에 대한 순이전액은 1991년에 1,070억 DM, 1992년에 1,150억 DM 이었으며 1993년에는 1,280억 DM에 달했다.¹⁾

신연방주의 재건이 애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수없이 많지만 경기부양의 조짐이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통일은 단 2년만에 대체로 달성되었다. 1991년 1월 1일부터 독일 전역에 걸쳐 평준화된 연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화폐·경제·사회통합 이후 2년만에 신연방주의 평균 연금은 2배로 증가하였다.

신연방주 보건제도의 확충과 개편은 거의 완료되었다. 세분화된 의료보험의 우수한 제도는 현재 정착되었다. 응급치료 분야는 전역에 걸쳐 보장되고 있다. 이 분야에서의 동서독지역 평준화 목표는 곧 달성될 것이다.

교통과 통신분야의 현대식 인프라스트럭처 창출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이 이룩되었다. 도로와 철도가 대대적으로 정비되었거나 새로 건설되었다.

독일 TELEKOM은 1991년과 1992년 중 신연방주의 고객을 위해 100 만 회선 이상의 전화를 가설하였다. 1993년 중에 850,000 회선이 가설될 것이다. 1년 이내에 달성한 이러한 실적은 동독에서는 10년 동안에도 불가능했던 것이다.

주택의 현대화, 정비, 신축을 위한 초(超)지역적 프로그램의 신속한 수립 및 도시건설 촉진을 통해 대대적인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촉진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과 더불어 1992년 말까지 신연방주 주택의 25% 이

1) 역주: 1994년도 순이전액은 1,370억 D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상이 주택정비 조치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기존건물 및 일부 폐건물을 개축하여 약 45,000 동의 주택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생태학적 정비가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은 시종일관 인간을 위한 책임감으로서 지상과제였다. 연방정부의 대대적 지원을 통해 구동독지역의 환경상태는 이미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예컨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Leipzig, Bitterfeld, Merseburg 지역의 공기오염상태는 특정 공기오염물질에 관한 한 1/3 이상이나 호전되었다. 구동독지역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부 심각한 유해물질은 70% 내지 부분적으로는 80%까지 절감되었다. 연방정부는 건강상 완전무해한 식수공급에 따르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과 1992년에 총 4억 DM, 하수정화 개선을 위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총 4억 2,500만 DM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장장 40년 동안, 역사와 문화의 공동체의식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분단독일을 결속시키는 이음쇠였다. 동일한 독일문화에의 참여의식이야말로 필경 전독일인을 묶어 준 강한 띠였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베를린장벽이 무너지자마자 40년간 사회주의로 인해 황망한 상태에 처해버린 구동독지역의 문화적 원형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졌다. 연방정부의 지체없는 지원은 내적 통일을 달성하려는 노력의 중차대한 일부분이었고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분야는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체를 사유화하며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국가와 개인경제를 통한 10억 DM 이상의 투자활동인데, 구동독지역에는 중소 기업이 거의 전무상태였다.

금년 중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결정적인 열쇠라 할 국가와 경제계의 투자용 지출은 약 20%가 증대된 무려 1,300억 DM으로 늘어날 것이다. 전체 경제적 급부(즉,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은 구서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을 위해 투자했던 비율보다 훨씬 높다.

경기부양의 조짐이 있다해서, 실적상태에 있거나 실적을 두려워하거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생활여건에 아직도 익숙하지 못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연방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매우 어려운 과도기에 처해 있다. 불가피한 구조변화로 인하여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곤경과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직업능력과 경험이 평가절하되는 등, 사회환경의 심한 변화로 인하여 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구서독 사람들에게는 구조변화를 위해 40년 동안이나 시간이 주어졌었지만 구조변화를 단시간에 실현해야만 하는 구동독지역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연대의식과 지원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불가피한 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다. 연대협약의 성공적 체결과 더불어 독일통일의 중대한 일부가 성공되었다. 그 중 신연방주를 위해 가장 의의있는 성과로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재정관계가 1995년부터 장기적이면서 건설적인 원칙에 입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그렇게되면 신연방주는 더 이상 재정지원 보조금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상태가 아니라 정상화된 주정부간 재정균형화제도에 떳떳하게 참여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신연방주는 적정한 재정상태를 구비하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구연방주의 재정상태에 필적하는 회복과정이 성공될 것이다.

신연방주는 1993년과 1994년의 과도기에 대해 긴급한 재건사업을 위해 추가지원을 받았다. 이제부터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는 현대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구동독지역 기존주택분야의 구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된 투자장애요인이 제거되었다. 10억 DM 규모로 책정된 추가적 주택건설정책 조치와 함께 주택건설은 구동독지역을 재건하는 기관차가 되었다.

나아가 신연방주를 위한 연대협약의 중대한 성과로는 225,000 자리의 추가 고용창출대책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협약에는 경제계가 신연방주에게 유리하도록 구매확약을 함을 비롯하여 다년간에 걸친 직업교육 자리를 확보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몇년만 지나면 신연방주가 유럽에서는 가장 매력있고 성장율이 높은 산업최적지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내적 통일로 향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만 하는 도전은, 미래의 공동이익을 위한 역사적으로 유일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제 2 장 외교·안보 정책

I. 통일과정의 외교·안보정책적 측면

1. 독일의 주권 회복

독일 통일은 우방국, 동맹국, 유럽 인접국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달성되었다. 통일 직전 수주간, 수개월 간의 국제적 협상을 통해 중유럽에 자리잡은 통일독일은 장차 정의롭고 지속적인 유럽의 평화질서를 구축하고, 초(超)동맹구조적 유럽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독일의 NATO 회원국 잔류를 비롯하여 기존질서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동서독과 4대 전승국에 의해 서명된 “독일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Verträge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일명 2+4조약)으로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이 보장되었다. 동 조약은 독일의 동맹체제 소속문제에 관한 자유재량권, 그리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소련군이 규정된 일정계획에 따라 구동독지역으로부터 철수한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다.

동 조약은 유럽의 평화질서 유지에 주된 국가이어야 할 통일독일의 영토가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동서베를린으로 구성된다는 국경의 최종적 성격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동 조약은 통일독일과 폴란드 공화국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기존국경을 확정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통일독일은 다른 국가에 대해 영토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앞으로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독일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의 생산과 소유를 단념할 것임은 물론, 이를 무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독일의 병력은 - 1990년 8월 3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럽 재래식 병

력 감축에 관한 회담에서 선언된 것과 같이 - 3년 내지 4년 이내에 370,000 명으로 감축된다. 외국군과 핵무기 및 핵무기 운반수단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 주둔 배치될 수 없고 그곳으로 이동배치될 수도 없다. 최종적으로 동 조약은 베를린과 독일전체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이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다.

4대 전승국과 통일독일에 의한 비준절차때문에, 2+4 조약이 1990년 10월 3일까지 발효될 수 없기 때문에, 1990년 10월 1일 뉴욕에서 4대 전승국은 통일 시점부터 2+4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이 중단된다고 선언하였다.

소련은 소비에트 최고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을 거친 후 1991년 3월 15일 4대 전승국 중 마지막으로 비준서를 통일독일 정부에 전달했다. 이미 서방 3대국 중 미국은 1990년 10월 16일, 영국은 1990년 11월 16일, 프랑스는 1991년 1월 17일 비준서를 각각 통일 독일 정부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역사적 과정이 종결되었다. 1991년 3월 15일 2+4 조약의 발효와 함께 베를린과 독일 전체에 대한 4대 전승국의 권한과 책임은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 결과 통일독일은 국내외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전후 유럽 역사의 가장 난해한 부담이자 골칫거리였던 독일문제는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해결되었다. 즉 2+4 조약은 독일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임은 물론, 이와 동시에 미래의 보다 나은 유럽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동 조약은 전 유럽에 걸쳐 자결권과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 더 이상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성문화하고 있다. 독일통일의 길은 애당초부터 유럽이라는 틀속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1990년 10월 3일 CSCE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4 조약이 통일로 향하는 자유 유럽을 실현하는 역사적 거보라고 환영해 마지 않았다. 1990년 11월 21일 파리에서 개최된 CSCE 정상회담에서 회원국의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은 독일 통일이 민주적으로 통일될 유럽의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질서의 구축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전후 유럽 역사상 최초의 방대한 군비축소조약인 유럽 재래식 병력의 제한 및 감축에 관한 조약 (VKSE, 영: CFE)이 NATO 회원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CSCE 정상회담으로 성문화된 파리헌장은 모든 회원국의 유일한 정체가 민주주의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치적 구속력과 함께 확정해 놓았다.

2. 신연방주의 EC 조약 및 EC 정책에의 편입

통일과 동시에 신연방주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임은 물론, 유럽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위해 EC 집행위원회는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회담 및 통일조약에 관한 회담에 참여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한시적 과도기조치가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1990년 12월 4일 편입지역인 신연방주를 위해 최종적인 적용규정과 경과규정이 담긴 방대한 EC 종합대책이 채택되었다.

3. 독일과 인접국가들 간의 조약관계 재편

2+4 조약 체결 당사국들은 그 서문에서 더이상 서로 적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대신, 상호간 신뢰관계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1990년 7월 5일과 6일, NATO 회원국들은 런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소련을 포함한 중부, 동부, 동남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한다는 공동의지를 확인하면서 동맹체제의 구조 및 전략 변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가결하였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 브뤼셀의 NATO 본부에 대사를 파견할 경우 신임장을 제정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2+4 조약은 독일의 주권회복과 유럽전체적 맥락속의 통일독일과 연관되는 각종 조약장치의 출발점이었다. EC 각료이사회가 1990년 12월 15일 유럽 정치동맹의 결성 및 경제, 통화동맹의 창설을 위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점은 특히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프랑

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렵고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독일 통일과 시간을 맞추어 이러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독일내 서방군대 주둔 문제의 재조정

독일내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 서방 전승 3개국, 기타 NATO 회원국과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전에 병력주둔권 분야의 새로운 법적 근거가 잠정적으로 합의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소위 독일조약 및 경과조약에 관한 합의 역시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래서 2+4 조약의 일환으로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군이 베를린에 한시적으로 계속 주둔한다는 사안이 결의되었다.

독일 통일 달성의 후속조치로서 독일내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서방측 NATO 동맹국과 맺은 NATO 주둔군 추가협정을 재검토 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9월 5/6일 Bonn에서 시작된 주둔군 문제 재검토 회담은 1993년 3월 18일 추가협정의 변경에 관한 협정, Soltau-Lüneburg 협정의 효력정지에 관한 협정 및 부대 합의사항이 서명됨으로서 완결되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통일독일의 주권이 심분 배려된 것으로서 당해 국민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5. 독일내 소련군 주둔 및 철수 문제의 재조정

구소련군의 주둔 및 철수에 관한 규정은 독일 통일에 따르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중대과제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이 문제의 처리는 신연방주와 그 주민들의 중대 관심사안이기도 하다. 조약체결의 기본원칙이 단 몇주동안에 확정되었다.

1990년 10월 12일 통일독일과 소련은 소련군의 한시적 독일주둔 조건 및 정연한 철군방법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1990년 10월 9

일 소련군의 독일 주둔 및 철수에 따르는 재정적 측면을 다루는 일부 과도기 조치에 관한 조약이 서명되었다.

주둔 및 철군조약의 규정대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일방으로 하는 측과 소련 서부주둔군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측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진행되었다. 12개 실무단은 군대의 주둔 및 철수에 따르는 문제점을 취급하였다.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는 과도기 협정에 따르는 각종 대책의 시행문제를 담당했다.

양측의 방대한 협력사례로는 시장경제조건에 적절한 병참공급의 확보, 주둔군 훈련활동에 관한 조정, 소련주둔군과 그 가족의 독일 법질서 준수, 환경 및 부동산 문제, 손상에 대한 보상, 관세 및 세금문제, 병력수송문제, 직업전환교육 대책 및 주택건설계획 등을 들 수 있다.

1992년 12월 16일자 콜 수상과 엘친 대통령에 의한 공동성명을 근거로 구소련 주둔군의 독일 철수는 박차를 가할 것이며 1994년 8월 31일이면 철군이 완료될 것이다. 1993년 7월말까지 구소련 서부 주둔군 총 546,200명의 약 80%가 철수하였다. 신연방주에 있는 막대한 구소련 주둔군 장비 역시 이와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구소련 주둔군의 주둔과 철수는 조약체결 당사국간의 신뢰구축이라는 조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협력관계로 볼 때 주둔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민과 주둔병력 사이에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 근거가 충분하다.

6. 철군을 위한 재정적 보장

소련측은 주둔비용 및 귀향운송비용을 비롯하여 구소련지역내 방대한 주택건설계획과 직업전환교육대책을 위한 정착비용으로서 막대한 분담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총 120억 DM이 4개년 동안 분할 지불될 것인바, 그 중 78억 DM은 주택건설용, 2억 DM은 직업전환교육대

책용, 30억 DM은 무이자 차관이다.

이와 동시에 이전 루블화 (Transferrubel) 및 부동산에 관한 취급규정이 합의되었다.

1992년 12월 16일자 공동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철수병력의 정착기금으로서 러시아측에게 5억 5,000만 DM을 더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구소련 서부주둔군 정착지원대책을 통해 CIS 각국에 수용될 병력의 사회복지여건을 안정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7. 소련군의 동독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

1992년 12월 16일자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측이 제기한 구소련 서부주둔군이 사용했던 독일 부동산 상의 자산에 대한 보상문제 역시 해결되었다. 양측은 이에 관한 한 상호간 청구권 제기를 사양하기로 하였다. 구소련군이 철수한 후 독일측에게는 이러한 부동산에 남아 있는 환경오염때문에 상당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대적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해당 부동산의 환경오염 여부에 관한 현황 파악이 시작될 것이다. 관련 부동산의 최초 가치평가를 비롯하여 위험방지용 긴급대책의 착수 역시 이와 관련된 과제이다. 필요할 경우 위험정도 파악을 위한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연방정부는 병력주둔으로 야기되는 환경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 계몽 프로그램 및 특수 환경장교 교육 훈련 등을 통해 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둔병력의 쓰레기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더이상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특수폐기물 제독처리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8.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

독일 통일에 따라 발생한 중대한 과제의 하나가 동독이 제3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문제였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처리 (통일조약 제12조)는 2+4 조약의 서명을 기해 동.서독 외무장관이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다자간의 의무사항이 되었다. 또한 1990년 11월 9일 독.소 협력조약이 서명될 때 핵심적 사안이 바로 이 문제이기도 했다.

신뢰성 보호, 당사국의 이해관계, 독일의 조약상 의무사항의 관점에서 그리고 법치국가적 기본질서에 따라 EC 관할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조약체결 당사국과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논의되었는데, 조약의 존속, 조정, 효력 상실 여부를 규정 또는 확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동독 외무부가 작성한 조약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동독은 137개국과 2,600건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 이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기타 조약도 있음이 드러났으며 조약 전체의 7%만이 동독 관보를 통해 공표되었을 뿐이었다. 총 2,200건의 국제조약이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었고, 이 중 80%는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기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을 근거로 하는 교육훈련의 승인 및 장학금 승인조치는 신뢰성 보호라는 관점하에 교육훈련의 목표 및 연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독일 통일의 날이 지나서도 계속 추진되고, 동독에서 취득한 직업시험 및 학위가 인정된다.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확정된 모든 조약은 법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관보 제II부를 통해 공시되었다 (부록, 도표 Nr. 1 “통일조약 제12조에 입각한 합의사항” 참조).

9. 외교망의 확충

독일 통일의 결과 동독의 재외공관이 폐쇄되고 그 대신 일련의 재외공관이 신설되었다.

1990년 10월 4일 부로 Breslau, Danzig, Stettin, Preßburg, Minsk에 총영사관이 개설되었다. 올란 바토르에 대사관 (1990년 11월 1일), 호지민 시에 총영사관 (1991년 4월 10일)이 설치되었다. 북한과 캄보디아와는 비록 외교관계가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평양 (1991년 1월)과 프놈펜(1991년 7월)에 각각 이익대표부가 설치되었다. 폴랜드의 경우 Kraukau (1991년 6월 1일)에 총영사관이 개설되고 Breslau 주재 총영사관의 별관이 Oppeln (1992년 7월 8일)에 개관되어 영사관망이 보완되었으며 헝가리의 경우 Fünfkirchen (1990년 11월 12일)에 총영사관이 개설되었다.

중유럽과 동유럽은 물론 통일 독일의 비중이 커진 국가 (서유럽 및 미국) 주재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제3세계의 현지에서 (개도국 프로젝트, 문화활동 등) 동독이 괄목할만하게 참여했던 기존 재외공관은 보장되었거나 존속되었다. 중유럽, 동유럽, 남유럽의 변화와 더불어 1991년 중반부터 수많은 재외공관이 신설되었다.

1991년 9월 2일 발트 3국의 수도 (Tallinn, Riga, Wilna)에 대사관이 설치되었다. 키에프 (1992년 2월 7일), 민스크 (1992년 3월 13일) 주재 총영사관은 각각 대사관으로 격상되었다. 티플리스 (1992년 4월 13일), 타쉬켄트 (1992년 5월 6일), 알마아타 (1992년 10월 20일) 주재 대사관이 신설되었다. 대리대사가 관장하는 소규모 대사관이 Baku와 Bischkek (1992년 9월 17일), Chisinau (1992년 10월 31일), Eriwan (1992년 12월 1일), Duschanbe (1993년 6월 10일)에 설치되었다. Aschgabad 에는 곧 대사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같이 독일연방공화국은 구소련의 모든 승계국가에 재외공관을 갖추게 되었다.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에도 다음과 같이 재외공관이 신설되었다. 1991년 11월 6일에 설치된 Laibach 주재 총영사관은 Zagreb 주재 총영사관과 함께 1992년 1월 15일 대사관으로 격상되었다. 1992년 4월 13일 Skopje (마케도니아)에 총영사관이 설치되었다. 사라예보 주재 대사관의 개관시점은 전쟁 때문에 아직 미지수이다.

프놈펜 주재 이익대표부는 1992년 2월 14일부로 공식 대표부가 되었으며 1990년 5월부터 설치된 Hermannstadt 주재 영사사무실은 1993년 4월 1일을 기해 총영사관으로 격상되었다. 1991년 9월 9일, 로마 국제기구 주재 상주대표부가 설치되었다.

이와같이 독일 통일 이후 외교망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독일외무부는 인력구조 및 직제구조에 따르는 막중한 부담때문에 공관망을 냉정하게 검토하여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안없이 공관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대사관을 대리대사관으로 격하시키거나 총영사관을 별관 내지는 명예총영사관으로 대치시키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제1차적 조치는 이미 금년도에 실현될 것이다 (부록, 도표 Nr. 2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신설 재외공관” 참조).

II. 통일과정에서의 연방군

1. 통일이전의 상황

동독 인민군 (Nationale Volksarmee, 약칭 NVA)은 “사회주의 전형적 군대”로서 공산당의 도구이자 특혜조직이었다. 구동독 공산당 (SED)은 군내부의 치밀한 조직망을 통해 NVA 소속 모든 장병들을 감시하였다. 거의 모

든 장교와 하사관의 절반은 당원이었으며 승진 역시 SED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SED를 통하지 않거나 SED를 반대하고서는 불가능했다.

병영에 수용된 인민경찰을 포함하여 창설 35주년에 접어 든 1990년 현재 NVA 병력은 175,000명에 달했다. NVA는 국민개병제도에 의한 군대로서 징집대상 청년들은 이미 청소년기에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18개월간 육군, 해군, 공군에 근무하였다.

NVA 소속 군인들은 대기체제 및 기동체제의 일부로서 모스크바가 중앙 통제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연계되어 고도의 대응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NVA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무장된 조직”도 있었다. a) 내독국경의 육지와 수상에 설치된 국경차단시설에 대규모 투입된 국경수비대 b) 국가보위부(Stasi) 내 병력 c) 직장전투부대

2. 동독 인민군의 해체

1989년 말 동독의 대변혁과 더불어 NVA 내부에서도 임무수행에 관한 이해 및 군의 역할에 관한 사고전환과정이 시작되었다. 즉 1990년 3월 민주적 방법을 통해 처음으로 합법적인 정치지도체제가 구성되자, 최소한 군부개혁만이라도 단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심리적 고려가 시작되었다. 1990년 7월 20일부로 모든 NVA 소속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복무선서가 도입된 것도 이와같은 맥락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NVA의 과거 및 그 지휘관들의 과거 경력때문에 군의 재편이란 오로지 미미한 출발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국제법 주체로서의 동독이 멸망한 이후, 1994년 말까지 독일전체를 위한 연방군은 총 370,000 명으로 감축된다는 기정사실에 처했던 NVA의 장래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독일군 전체에 대한 단일 지휘체제는 명령권자이자 지휘관인 연방 국방부장관에 속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기정사실이었으므로 동독 국방부는 해체대상이었다. 애당초 NVA는 “한 국가내에 2개 군대”라는 이론을 고수하였지만 국가통일의 달성과 더불어 NVA의 존

립은 중단되었으며 기타 “무장된 조직”의 요원을 제외한 NVA 소속장병들은 군인법에 따라 잠정적으로 연방군 소속 장병이 되었다. NVA 산하부대는 하나씩 해체되었으며, 연방군 산하부대는 기존 연방군 소속군인과 해체된 NVA 군인으로 재구성되었다.

전독군 구성을 위한 각종대책을 준비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7일 Strausberg 에서 동독국방부와 합의하에 연방국방부 통합대비단이 동독국방부 내에 설치되었다. 통합대비단의 임무는 동독국방부와 부단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가입지역인 구동독지역 내 연방군의 미래구조형성에 필요한 결정사안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특히 병력, 자재, 예산, 사회복지 관련사안, 인프라스트럭처, 통신망, 위생시설, NVA 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현황과약을 비롯하여 명령권과 지휘권 인수에 따르는 문제점의 사전해명, 가입지역에 신설될 지휘조직의 구성과 숙영지에 관한 준비 등이었다. 통합대비단은 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원은 지원인력을 포함하여 모두 20명 이었다. 통합대비단의 임무는 1990년 10월 3일 연방국방부 의청의 설립과 함께 종료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직전, 동독이 바르샤바 조약으로부터 탈퇴하자 연방군은 독일 통일의 달성과 더불어 독일 전체에 대한 국방의 임무를 인수하였다. NVA를 대표하는 고급지휘관들은 동독국방부장관 Rainer Eppelmann에 의해 직위해제되었다. 약 7,000명에 달하는 NVA의 직업장교들은 자발적으로 전역하였다. NVA 소속 장군과 제독, 55세 이상의 직업군인, 정치장교, 군검찰청과 군사법원 소속 군인들은 연방군으로 인수되지 않았다. 국경수비대와 민방위 체제 요원 6,000명은 연방군 내에서 민간근무직의 특수지위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았다. 동독국방부 Rainer Epelmann 장관은 일일명령을 통해 약 103,000명의 NVA 군인들을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근무해제시켰다. 연방국방부 Gerhard Stoltenberg 장관의 독일 통일 관련 일일명령의 본문이 부록의 도표목록 제3호 (1990년 10월 3일자 연방국방장관의 일반명령)로 수록되어 있다. NVA에게는 군인과 병무행정의 구

분이 미지의 사안이었다. 그래서 NVA 소속 인력은 해체된 후 연방군의 소속부대 또는 병무행정청의 일원으로 배치되어야만 했다.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연방군의 관할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약 1,500개의 단위부대 및 근무처가 확대되었다. 통일 시점까지 495,000명의 군인과 183,000명의 군속으로 구성되었던 연방군의 인력은 약 90,000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중 약 50,000명은 구 NVA 소속 단기지원병 및 직업군인으로서 “대기병”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약 48,000명은 군속이었다.

이미 1990년 12월 31일부로 구 NVA 소속 장기군속자 약 20,000명은 NVA 원호규정에 따라 “확대원호조치”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전역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구 NVA 소속요원 약 2,000명은 그 후 몇개월 동안에 걸쳐 병무행정분야에 전속되었다. 이는 기본법 제87b조가 의미하는 병무행정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군인들이었다. 1994년 말까지 독일군의 병력수는 370,000명으로 감축되고 군속수는 서기 2000년까지 약 151,000 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연방군은 통일과 더불어 우수한 장비와 현대식 무장을 갖출 책임을 지게 되었다. NVA와 국경수비대 소유 자재와 부동산 일체를 비롯하여 직장전투단, 민방위조직, 국가보위부, 인민경찰, 체육.기술협회 소유 군사장비를 안전관리하고 무자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다.

연방군은 통독과 더불어 전차 2,337대, 장갑차 5,980대, 대포 2,245문, 항공기와 전투용 헬리콥터 479기, 군함 71척을 NVA로부터 인수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120만정의 개인 소화기, 약 300,000만톤의 탄약을 비롯한 막대한 양의 장비도 인수하였다. 이와같이 방대한 비축품은 동독 전역에 걸쳐 단 며칠 이내에 완전동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자,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토록 어마어마한 물질적 잔재를 안전하게 보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 내지 매각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1990년 10월 3일 이래 당면한 중대 결정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물질적 “잔재” 중에는 약 2,280건의 다음과 같은 각종 군용 부동산도 포함된다. 병영, 군용막사, 저장고, 훈련장, 훈련시설, 지하시설, 항만, 비행장 등이 그와 같은 것인데 이 중 3/4은 연방군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1993년 3월까지 80% 이상이 가처분 상태에 처한 다음 연방정부, 신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사용목적의 일반 기본재산으로 전환되었다. 민간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은 불량한 상태 내지 황폐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숙소와 부속건물과 난방시설은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환경보호 면에서 최소기준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반대로 군수품 비축창고는 비교적 고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연방군은 1,455 Km에 달하던 지난날 동서독 경계선에 연해 설치된 136 Km의 장벽, 818개의 관측용 망대와 지휘소를 신탁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 1961년 이래 국경차단장치에는 무려 130만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었다.

1985년까지 국경수비대가 지뢰제거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34,000개에 달하는 지뢰가 안전하게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1990년 10월 3일부터 국경차단시설의 제거 및 지뢰탐지작업이 즉각적으로 착수되었다. 지뢰탐지작업을 위해 연방군 지휘하에 지뢰분해단 (오늘날 Spreewald-Dahme 에 있는 Pätz 소재) 중심으로 과거 국경수비대원 약 6,000명이 투입되었는 바, 이들은 특수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국경차단시설 제거는 연방군의 신탁관리를 통해 1991년 9월 30일까지 속행되었다. 그 다음부터 이 작업은 민간기업체에게 위임되었다. 현재 수주회사에는 13,0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과거 국경수비대원들이었다. 1993년 말까지 국경차단시설이 제거되고 1995년 초까지 지뢰탐색작업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신연방주에의 연방군 신설

1990년 신연방주에 연방군을 신설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신속한 통합군 형성 및 병무행정의 구축이라는 복잡다단한 문제가 최단시간내에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했다. 게다가 각종 경과 규정이 수립되어야 했다.

연방정부는 독일 통일의 날을 기해 각 연방부서로 하여금 베를린에 “외청”을 설치하여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신·구 공동성장”을 위한 부서차원의 지휘요소를 구성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90년 10월 3일 연방국방부 역시 외청을 설치하여 동독국방부의 해체 및 이와 동시에 부서의 기타 임무를 수행하며 베를린 소재 여타 연방 및 주정부기관에 대해 국방부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오늘날 외청의 주임무는 병영, 부동산, 환경보호, 군비(軍備) 등의 분야에 대한 관장이다.

가입지역내 전군을 지휘하기 위하여 우선 연방국방부 직할 명령기관으로서 Strausberg 에 연방군 동부지역 사령부를 설치하여 1명의 사령관을 배속하였다. 사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 명령권과 지휘권의 인수시점에 존재하던 육·해·공군 전 부대에 대한 지휘
- 추진 중인 지휘조직의 분산 실현
- 미래의 병력구조에 부적합한 근무처와 단위부대의 해체
- 계속활용 또는 폐기처분될 때까지 NVA 장비의 인수 및 보전
- 소련군 철수조치의 지원

이와같은 과도기적 군사지휘는 단위부대와 근무처에 대한 책임을 참모차장과 의무사령관에게 단계적으로 이양함으로써 단기간내에 끝낼 수 있었다. 그 결과 1991년 6월 30일 연방군 동부지역 사령부가 해체되게 되었는데 이

로써 군사통합의 중요한 조직상의 단계가 성공리에 완료되었다.

군사지휘체계의 구축과 병행하여 부대 구축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육군과 중앙의무회의의 구축은 단 3년 이내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완료되었다. 공군과 해군, 그리고 육해공군 통합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수많은 단위 부대, 근무처, 학교등이 현재의 구서독지역 주둔지로부터 가입지역에 있는 새로운 주둔지로 이전되도록 할 것이다. 현재 이와같은 이전계획이 준비 중이며 그 중 제1단계 조치는 1994년 중에 완료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내적통일달성을 위한 연방군의 현저한 기여가 아닐 수 없으며 주권영역의 신속한 단일화와 확장에 걸맞는 병력의 분산배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단위부대와 근무처의 이전은 곧 당면한 연방군 소속요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막대한 추가투자가 뒤따라야 되는데 국가예산의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일정계획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내적 통일에의 길을 성공리에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이와같은 급부능력은 창출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1994년 말이면 370,000명의 연방군 중 58,000명이 가입지역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본서 부록 도표 Nr. 4. "1993년 5월 5일자 초당적 연방주의 위원회에 제출한 가입지역내 연방군 주둔계획에 관한 제4차 최종보고서" 참조).

1990년 10월 3일 이래 새로운 연방군을 구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우선 약 2,000명의 병력이 구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되었다. 오늘날 약 7,000명의 직업군인 및 단기지원병이 구서독지역으로부터 파견된 후 신연방주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방군 구축의 성과는 연방군으로 자율적으로 전입된 舊 NVA 출신 단기 지원병 및 직업군인 25,000명의 성실하고 충성스런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군 통합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구 NVA 출신 직업군인 및 단기 지원병의 통합은 연방군 재편이라는 맥락으로 볼 때 단지 간접적 관련사안일 뿐이었다. 약 12,000명의 장교와 12,000명의 하사관이 2년 간에 걸친 한시적 군인으로서의 임시근무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연방군의 인수능력은 장교 6,000명, 하사관 11,000명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수요구조상 3,200명의 장교와 7,650명의 하사관만이 계속 근무하도록 선별되었다 (1993년 4월 30일 현재). 직업군인으로서 계속 근무하게 될 장교들은 사전에 “초당적 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장기근속 지원자 중 다수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었다 (부록, 도표 Nr.5. “구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편입” 참조).

인수병력이 연방군내에서 상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여부는 신중한 주의가 필요로 했다. 그래서 적절한 보충교육훈련을 통해 중요한 기본여건이 갖추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일상근무에 필요한 행동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집중적인 교육훈련과 지속적인 연수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충훈련교육을 통해서 군사지휘관으로서 승진할 때 기뢰군등의 원칙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 지원병과 직업군인을 연방군으로 편입시킬 때 적절한 원호규정을 수립하는 것도 중대사안이다. 이에 통일조약은 다음과 같은 특수조치와 함께 군인원호법을 이양한다고 명문화 해 놓았다. 즉 가입지역의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가입지역에서 취득한 연금수령권이 법정연금보험 산정시 중요기준이 된다는 점을 연금이양법과 군인원호법 경과규정으로 구체화 해 놓았다.

현재 단위 부대의 교육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자매결연관계의 일환으로 구서독지역 단위부대를 통해 수행되던 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단위부대의 교육훈련 수준은 구서독지역 연방군의 교육훈련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병역의무 역시 예컨대 구서독지역의 징집연령해당자가 신연방주로 소집

되거나 그 반대로 구동독지역의 징집연령해당자가 구연방주로 소집되는 방법을 통해 내적통일 달성에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혼합 근무원칙”(Durchmischung)은 장기근무병과 군속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군·민 협력분야에 있어 지금까지 군(Kreis)과 주(Länder) 차원에 걸쳐 대대적인 민간조직이 구축되었다. 군·민협력은 특히 재난구조지원의 일환으로 병력이 투입될 때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부대”에 대한 인정도를 높이는 긍정적 파급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육군구조가 가입지역에 조기도입됨으로써 국가차원의 지휘관련 참모부의 통합을 비롯하여 순수한 지역관련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이 실증되었다.

공군은 비행안전을 유지하고 NATO 방위영역 이외의 영공에 대한 신성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임무는 이미 1993년부터 가입 지역내 비행장에서도 실현되고 있다.

동서독 지역에 걸친 각급 책임근무처의 지휘 능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광범한 정보교류는 오로지 충분한 기술적 통신가능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연방군의 통신체제가 기술적으로 다른 구동독 인민군의 “참모통신망 S 1” 및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지휘통신망” 중 사용가능한 부분을 연결해야 가능하다. 독일연방체신청 (Telekom)의 전화선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 각종 조직적,기술적 조치에 병행하여 - 연방군 고위사령부의 이동용 무선통신시설을 2년 이상 야전용으로 활용될 것인 바, 투입병력이 고도의 책임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공군과 해군용 전술 통신망 역시 마찬가지이다. 모든 고정 통신망은 기술적 운영상 새로 조정되어야 한다. 통신망을 궁극적인 사용목적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에 추가적인 합리화 조치들이 뒤따라야만 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날에 즈음하여 병무행정의 효율적인 기본구조 역시 구축되어야만 했다. 그 결과 신연방주의 각 지방 병무행정 관계기관 및 시설은 구 서독지역처럼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제 VII 병무행정청이 Strausberg에 설치되었으며 그 관할영역은 가입지역 전역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에 병행하여 (Berlin 이외의) 각 주 수도에 5개의 병무행정 지청이 설치되었다. 병무행정 지청장 휘하에는 19개의 주둔지 병무행정지소, 26개 군(Kreis)병무행정지소, 연방언어청 외청 1개소 및 기타 지소가 설치되어 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부록, 도표 Nr.4. “1993년 5월 5일자 초당적 연방주의위원회에 제출한 가입지역내 연방군 주둔계획에 관한 제4차 최종보고서” 참조).

병무행정체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발전되었다. 병무행정의 임무는 주로 과거 NVA 에 소속되었다가 재편성된 후 연방군의 단위부대 내지 병무행정에 근무하게 된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구서독지역 출신 인력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 병무행정지소와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22,000명의 민간인에게는 그 지방에 존재하는 안정된 일자리이다. 관리직 공무원 신분으로 전직을 신청한 3,000건 중 지금까지 절반 정도가 긍정적 판정을 받았다.

1990년도 10월 이래 신규 채용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추가연수교육이 근무일수로 산정할 때 총 200,000일 정도 실시되었다. 각급 기능차원을 위한 특수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이 개설되어 법치주의 국가적 행정행위의 기본원리 및 병무행정에 관한 필수지식 등이 전달되고 있다. 지금까지 6,600명의 참가자들이 연방 병무행정 및 국방기술 아카데미, 연방 공공행정 학교 (연방군 행정학부), 연방군 행정학교 (II로부터 IV) 등 중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지방교육기관의 연수과정 및 직장 연수과정도 있어 총 20,000명에 달하는 제 VII 병무행정산하 관리직 공무원, 사무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연수교육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시간은 각 근무처에 심한 업무장애를 야기시켰다.

이미 1991년부터 병무행정기관은 신연방주 출신 신규채용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착수하였다. 1993년 말까지 기술직 및 행정사무직 공무원 교육훈련생 320명을 위한 연수원 자리가 신연방주에 마련되었으며 구서독지역에도 신연방주 출신 직원 520명을 위한 연수원 자리 (그 중 약 300명은 관리직 공무원)가 마련되었다.

연방군이 인수한 NVA 군사장비의 안전하고 정연한 관리문제는 특히 신연방주에 있는 단위부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구 NVA 소유장비의 거의 대부분은 연방군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타 이유 때문에 연방군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1990년 11월 19일 서명된 유럽재래식무기감축에 관한 협정 (CFE)에 따라 제한조치에 처한 약 10,000종의 무기시스템을 들 수 있다. 독일이 보유할 수 있는 이 무기시스템의 최대량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1=1”이라는 공식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독일은 모든 CFE 협정체결 당사국 중 제2위의 감축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으며 협정상 인수한 이 무기전체를 1995년 11월말까지 파기해야만 한다. 이 무기시스템을 적시에 파기하기 위한 고액의 비용은 1억 D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장비는 다른 부서 (예: 재난 방지), 신연방주 공공기관, 제3국의 인도주의적 임무수행, 연방정부가 인정한 자선단체 등에게 무상공급된 후 활용될 것이다. 장비의 일부는 장비구입지원 및 NATO 방위지원의 일환으로 우방국에 기증하거나 판매할 것이다.

나머지 장비는 연방정부의 위탁회사인 VEBEG (연방재산매각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매각되거나 아무 이윤이 없을 경우 폐기처분될 것이다. 분류된 장비는 장비담당부서가 적절하게 매각할 때까지 한 기업체에 의해 보관된다. 산업폐기조치는 거의 신연방주에 있는 기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

이 이룩되었다.

신연방주 환경보호문제는 연방군에게 특수한 도전을 의미하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인수한 부동산 중 일부는 환경을 손상시키는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1,420개의 난방시설은 연방유해물질 방출보호법의 기준에 미달하며, 노후한 탱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된 구동독 인민군 무기 중에는 독성이 강한 액체 로켓 연료와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이토록 전대미문의 엄청난 환경문제는 오로지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다. 우선 다음과 같은 중점대책이 취해진다. a) 기자재, 탄약, 위험물의 폐기처리 b) 장기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있는 부동산의 환경피해정비 c) 훈련장을 환경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자연잠재력을 보존하고 계속 개발 d) 환경보호인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기관의 구축 e) 모든 연방군 소속요원에게 환경보호의식을 강화시키고 환경보호에 적절한 행동방식을 고양. 이미 환경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 훌륭한 결과가 달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진전을 위하여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계속 군사용으로 활용될 약 530개의 부동산에 대한 정비는 구서독지역의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조치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군인용 숙소는 1991년과 1992년에 걸쳐 16억 DM의 투자를 통해 괄목할만하게 개선되었다. 이 재원 중 막대한 양이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에게 흘러 들어갔다. 병영과 부속건물의 신속한 개선이 우선적 목표이기는 하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서독지역 수준으로 평준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된 독일군의 군인들에게는 군종목사로부터 심령의 안정을 배려받을 권리와 종교활동을 아무런 지장없이 수행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구연방주에서는 연방군내 신구교 장병들을 위한 목회활동이 국가와 교회가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확고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종목사의 활동은 교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신연방주 카톨릭 장병들을 위한 군종목회활동은 통일조약을 통해 이양된 법적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신도 거주지역과 근무지가 널리 산재되어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반해 신연방주에 있는 주립 신교교회측은 지금까지 군종목회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연방국방부는 구동독지역 교회의 여망에 걸맞는 규정을 도입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신교도 장병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군종목회활동에 관한 계약에 입각한 군목활동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연방국방부는 동·서독군을 통합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연방주 주립신교회가 지금까지 습득한 인식과 긴급한 교회내적 토론과정을 바탕으로 군종목회활동에 관한 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미래의 양호한 관계수립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가입지역내 연방군용 주택공급은 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과 더불어 독일은 약 64,000 동에 달하는 관사를 구동독 인민군으로부터 일반 기본재산으로 인수하기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은 현재 연방주둔지역 이외에 있어 연방군 주택공급용으로 고려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점유상태에 있고 심각한 주택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아무런 변동이 일어날 수는 없다. 신연방주 연방군 가족에게 적절한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총 9,000동의 주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연방군에 의해 수행되는 직업육성업무 역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2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인수될 수 없는 구동독 인민군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전환교육 및 추가연수교육대책인데,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원된다. 지금까지 12,000명 이상의 구동독 인민군 출신 장병들이 직업연수교육을 받았다.

연방군은 효율적인 군·민 협력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훌륭한

동반자가 되었다.

연방군은 공공통신망이 완전 차단된 상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통신시설을 사용토록 하고 독일체신청 TELEKOM 의 확장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치를 통해서 심각한 재건과정의 공공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연방군과 지방자치단체, 각 주정부, 각종교육기관, 시민들이 광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결과, 구태의연한 군의 고립상태가 대체로 극복될 수 있었다. 또한 연방군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설립 및 자재구입 발주 등을 통해 각 지역경제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연방군에 대한 인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에게는 대화중심적으로 수행되는 홍보활동을 통해 안보정책과 연방군에 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즉, 연방군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내적 통일 달성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부록, 도표 Nr.6.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연방군에 관한 각종 일반 문헌” 참조).

제 3 장 국가·헌법·행정·사법

I. 국가와 헌법

1. 舊동독 사회주의체제하의 헌법과 기본권

구동독 헌법은 외적으로 ‘국민’(Staatsvolk)과 ‘구획가능한 국가영역’과 나아가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舊동독의 自主國家性을 인정받을 요소를 설정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또한 내적으로는 공산당(SED)의 지도적 지위를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근거한 구동독체제의 기본적 성격을 확정해 주어야 했다. 이로써 구동독 헌법은 당과 국가의 이해를 합치시킨 공산당의 한 권력수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형식적으로 볼때 구동독 헌법은 독일 연방공화국(BRD)의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기본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구동독 헌법의 기본권조항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기본권 부분이 기본법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는 다른 비중을 갖고 있었으며, 그 내용에서도 차이점이 있었다. 서독 기본법의 기본권은 법치국가적 자유관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활동과 국가권력 행사에 우선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권은 불변의 가치를 지니며 헌법의 서두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구동독의 기본권은 막스-레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목표와 목적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러한 종속성으로 인해 구동독-헌법 내에서 기본권조항은 ‘사회주의체제와 국가질서’에 관한 상세한 언급 뒤에 이어져 있다.

서독 기본법내에서 기본권은 아무 제한없이 허용되어 있으며 또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력이 확실히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에 舊동독의 기본권은 자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와 개인이해의 일치원칙이 맑스-레닌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전제되어 있다. 각 개인은 교육을 통해 ‘任意로’(freiwillig) 사회주의적 체제안으로 편입되어지도록 조장되었다. 그러므

로 사회주의적 기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념지워졌다. 인간의 사회화와 개인의 집단에의 동화 그리고 공산당에 의해 설정된 사회주의 건설 과업에의 헌신적 참여동기 부여가 바로 그 목표이다.

舊동독의 기본권이 특히 이념에 바탕을 둔 기본의무와 연결되어 상대화된 것은 이러한 목표설정과 부합한다. 즉 일반적 공동결정권과 공동형성권의 실현이 '모든 시민의 지고의 도덕적 의무'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구동독의 방위 의무와 근로의 의무, 나아가 직업교육의 의무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권 이해에서 볼 때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자유를 의미하였다. 즉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자유만이 기본권으로 허용되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만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국민의 일반의무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회정책적 목적설정으로 인해 공산당에 의해 설정된 사회적 利害는 모든 기본권을 제한하는 고유의 한계선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제한이 가능해진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반사회주의적인 선동과 선전, 특히 제국주의적 반동분자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선언을 위한 자유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노동자들이 획득한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구동독 헌법, 교과서, 베를린, 203 페이지).

또한 '이러한 헌법원칙에 상응하게'나 '헌법원칙과 그 목표의 범위내에서'와 같은 문장표현을 통해 기본권을 구동독 헌법의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하였다. 구동독 헌법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전환을 지향하였고 공산당의 유일지도체제를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권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될 수 있었다. 즉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물론, 특히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 단결의 자유등이 결정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또한 쟁의권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개인적 자유권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구동독지역에 한하여 인정되었다.

2. 기본법의 발효, 경과규정과 예외규정;

통일에 따른 기본법 개정

헝가리와 폴란드의 개혁과정을 통해 고무된 구동독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결권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길을 밝히 시작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진정한 언론의 자유, 노동조합형성의 자유, 정당형성의 자유, 그리고 자유,평등, 비밀선거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였다.

1990년 10월 3일 구동독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가입이 발효됨으로써 기본법은 신설 5 개주와 동베를린 지역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써 법치주의적,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에서 상호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던 兩獨시민들의 소원은 성취되었다.

물론 1990년 10월 3일자로 완성된 독일의 통일과 통일조약 제 4 조에 의해 기본법의 개정과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통일조약 제 5 조는 통일독일의 입법자에게 기본법의 개정과 보충을 위해 향후 2 년내에 독일통일과 연관되어 제기될 문제들을 취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통일조약 제 6 조와 제 7 조는 기본법 제 131조 (1945년 5월 8일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관계)에 대한 예외규정과 財政법률분야의 기한부 수정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로 인해 기본법내 독일의 상황과 관련된 특수규범들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중에 하나가 前文改正이다. 새로 작성된 前文은 1990년 10월 3일 舊동독의 연방가입과 함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권 행사를 통해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으며, 이로써 기본법이 전 독일국민에게 적용됨을 천명하고 있다. 재통일의무를 명시했던 舊前文의 문항들은 이러한 새 내

용으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전문은 기본법 제 23 조에 의해 통일시까지 기본법의 적용이 유보되어 있었던 舊동독의 州들을 열거함으로써 연방주의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통일시점의 역사적 진전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독일의 다른 지역 - 舊동독 지역 - 의 연방가입으로 그 존재목적이 달성된 기본법 제 23 조는 삭제되어졌다. 또한 서독의 기본법이 통일의 성취후에도 전 독일에게 적용됨으로써 기본법 제 146 조 -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는 결과적으로看過되었다.

통일조약 제 4 조에 명시된 다른 주요 기본법개정항목은 통일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연방상원에 있어서의 투표권비중의 상대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 51 조에 규정된 각 州당 투표권수를 7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큰 州에게 유리하도록 할당하였다. 또한 붕괴된 舊공산국가가 남긴 어려운 채무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능력을 연방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기본법 제 135a 조에 규정된 국가채무의 한정가능성이 구동독의 채무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새로 삽입된 기본법 제 143 조 규정은 국가적,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 법적통합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법률상의 해답을 주고 있다. 즉 기본법 제 143 조는 삭제된 기본법 제 23 조를 대체하여 완전한 법통합이 이루어지기 前까지의 과도기간동안 헌법규범의 통일적 적용에 대한 부분적인 예외를 허용한다.

3. 독일 통일과 관련된 헌법개정(통일조약 제 5 조)

통일조약 제 5 조는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될 기본법 개정과 보완문제를 취급'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통일조약은 연방과 주간의 상호관계, 국가목표규정, 그리고 기본법 제 146 조의 적용문제에 관해 보다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위의 권고내용을 구체화하였다.

4. 합동 헌법 위원회

이 권고안에 근거하여 1991년 11월 28일 연방하원과 1991년 11월 29일 연방상원의 만장일치를 거쳐 합동 헌법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92년 1월 17일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합동 헌법 위원회의 구성은 64명의 정위원(Mitglieder)과 64명의 대표인(Stellvertreter)으로 이루어 졌다. 그 가운데 32명의 정위원과 동수의 대표인은 연방상원에서, 나머지는 연방하원에서 위촉되었다. 연방상원에서는 16개 州정부가 그 소속원들 가운데 각각 2명의 정위원과 2명의 대표인을 파견하였고, 반면 연방하원에서는 크고 작은 정파간의 세력에 비례해서 선출되었다.

합동 헌법 위원회의 임무는 헌법의 개정과 보완문제들을 심의하여 입법기관에게 제출할 提案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안을 통해 앞으로 독일 연방하원이나 연방정부 또는 연방상원에 의해 발의될 기본법개정안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同 위원회의 목적이 있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합동 헌법 위원회의 작업에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전문적인 자문을 함으로써 지원하였다. 그리고 또한 연방정부는 기본법 개정은 독일 통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하며 헌법의 전면적인 수정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항상 피력하였다. 그 이유로는 현재의 기본법은 1949년 이래 그 전의 어떤 독일헌법보다 더 잘 준수되어 왔으며 국민의 의식속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동 헌법 위원회는 심의결과 아래사항들을 기본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였다:

- 연방과 주간의 입법권의 조정과 그 입법절차,
- 남녀 평등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관련하여 기본법 제 3 조

의 보완,

-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서 도입,
- 소수 인종의 지위,
- 연방영역의 영토적 재 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 사회보장제도의 연방화.

그러나 이러한 합동 헌법 위원회의 제안들은 아무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제안에 불과하다.

유럽통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심의들은 합동 헌법 위원회의 업무종결 전에 이미 기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제 23조, 제 28조 1항 3절, 제 45조, 제 52조 3a항, 제 88조 2항)

위의 개정들은 마스트리트 조약 (Maastricht Vertrag)의 인준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다.

II. 신연방주의 형성

1. 신연방주의 형성

1952년 7월 23일을 기해 동독에서는 메클렌부르크 (Mecklenburg), 작센 (Sachsen), 튀링엔(Thüringe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의 기존 5개주(Land)가 해체되고 15개 지구(地區,Bezirk)으로 재편되었다.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는 원래 변방주 (Provinz)였으나 소련 군정치하였던 1947년 7월 21일 주로 변경되었다. 이 당시 형성된 15개 지구(地區)의 경계는 기존 각 주 사이의 경계와 완전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된 인민의회 선거 이전에 2개 내지 최고 8개의 주로 재편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1952년까지 존속되던 주 구조를 부활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행정개혁” 위원회로부터 “5개주 형성 합의안”으로서 건의되었던 것이다.

자유선거로 구성된 동독 인민의회는 15개 군 (Kreis)에서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친 다음, 1990년 7월 22일 3분의 2의 찬성으로 동독내 주의 형성을 위한 헌법법률을 의결하였다. 이 법률이 1990년 10월 14일을 기해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 의 5개 주를 형성하도록 규정한 주설치법 (Länder-einführungsgesetz) 이었다. 주설치법의 발효 및 이 법률에 따른 주의 형성은 통일조약을 통해 동독이 서독에 가입한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조기에 실현되었다.

2. 재편

그러나 주설치법을 통해 기존 지구(地區)를 병합재편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 (Gemeinde)는 1952년 7월 23일까지 소속되어 있던 주가 아닌 다른 주에 소속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주설치법은 이런 지역을 위해 관련 주 간의 국가조약 (Staatsvertrag)을 통해 주민수에 관계없이 주 사이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부여해 놓았다. 이와같은 가능성 부여는 1990년 10월 3일의 주 형성 이후에 1952년 7월 23일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주로 소속되기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였다.

1992년 브란덴부르크 주와 메클렌부르크-포어퍼메른 주 (총 9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환)를 비롯하여 튀링엔 주와 작센 주 (총 10개의 Thüringen 주내 지방자치단체가 Sachsen주로 복귀)가 각각 주경계 변경에 관한 국가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발효되었다. 기본법 제29조에 어긋나는 이러한 법률규정은 기본법 제 143조 2항에 따라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기본법 제29조만이 적용될 것이며 이 조항은 또

한 이미 오늘날 신·구 연방주 사이의 국가조약을 통하여 또는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연방법률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이 10,000 명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기본법 제29조 7항: 예: Mecklenburg-Vorpommern 소속 Neuhaus 의 Nieder-sachsen 복귀).

기본법 제 29조의 관련 주들 간에 합의를 통한 재편 규정에 저촉되는 Berlin과 Brandenburg 지역의 재편은 기본법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통일조약 제 5조를 통해 가능하다.

3. 신연방주의 헌법

주설치법은 신연방주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구성된 각 주의회로 하여금 주헌법 제정을 위한 주의회를 소집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각 주의회는 완전한 주헌법이 발효될 때까지 국가기관의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잠정적인 조직상의 조례를 마련한 다음, 최종적인 주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현재 5개 신연방주 중 Brandenburg, Sachsen, Sachsen-Anhalt의 3개 주에 걸쳐 주헌법이 발효되었다. Thüringen 주는 1993년 4월 공동안을 제출해 놓고 금년내로 신헌법이 통과되도록 진행 중이다. Mecklenburg-Vorpommern 에서는 1993년 5월 임시 주헌법이 발효되었다.

각 주는 의회민주주의 정부체제를 구체화 함에 있어 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폭넓은 적용범위에 따른 대원칙을 준수하면서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사항을 강조해 놓았다. 새로운 주헌법의 특징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헌법에는 야당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고 야당에게 기회균등의 권한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Sachsen 주헌법 제40조 및 Sachsen-Anhalt 주헌법 제48조). 주헌법에는 행정부를 감독할 때 군소정당의 권한에 관한 조항 역

시 마련되어 있는 바, 주의회 재적의원 1/5이 동의하면 조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을 비롯하여 기본권 관계규정 및 국가의 목표에 관한 정의 등이 새로운 주헌법에 열거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침해에 맞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방어권과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통하거나 자유선거로 구성된 의회를 거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주헌법의 여러가지 구체화 가능성의 장단점은 실제 집행된 후에야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3년 동안에 마련된 신연방주의 주헌법과 헌법초안은 신연방주민의 의식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날 신연방주민들은 법률제도의 구체적 형성과 전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주헌법에는 1990년 10월 3일부터 새로운 국가형태와 법률제도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기대가 담겨있다. 따라서 신연방주의 각 주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내적 공동성장을 위한 중차대한 기여가 아닐 수 없다.

Ⅲ. 수도와 국가기관 소재지

1. 통일조약의 규정

통일조약에는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조 (1)항).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는 “독일통일 달성 이후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

2. 입법기관의 결정 사항

1991년 6월 20일 독일연방의회는 의회 소재지가 베를린임을 의결하였으며 연방정부가 의회에 대한 책임을 베를린에서 수행하고 이를 위해 정부 소재지를 베를린에 두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를린과 본 사이에는 공정한 업무 분담이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의회 소재지와 정부 기능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능조정이 모색되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내적 의견수렴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연장 의원협의회(Ältestenrat) 결정에 따라 3개 위원회(기획위원회, 건설위원회, 인사·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독일 연방의회 최연장 의원협의회는 1991년 12월 12일과 1992년 6월 17일 기획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종결처리하였다. 제2차 중간보고서에는 현재 본에 있는 의회의 업무수행능력과 필적하는 상태가 베를린에 조성되는 즉시 독일연방의회가 베를린으로 이전한다고 확정되어 있다.

1991년 7월 5일 연방상원은 독일연방의회의 소재지 결정사항에 관한 통보를 인지하자마자 연방상원의 소재지를 본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연방상원은 앞으로 얻게 될 경험을 비롯하여 향후 수개년간의 연방제도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발전될 지 등을 참작하여 연방상원 소재지에 관한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유보해 놓았다.

3. 연방정부의 결정사항

연방정부는 1991년 6월 20일자 연방의회 의결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1년 6월 26일자 각의결정을 통해 연방내무성 산하에 사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베를린 - 본 수도이전 실무단을 구성하였다. 동 실무단의 임무는 연방의회 결정사항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대책을 준비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1991년 10월 16일과 12월 11일 연방각의는 동 실무단의 1991년 9월 30일

및 12월 5일자 중간보고서를 의결하였다.

1992년 6월 3일 연방각의는 수도이전에 관한 연방정부의 종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헌법기관인 의회와 정부의 소재지로서의 베를린의 확장을 위해 이미 착수된 대책에 관한 조감, 앞으로 착수예정인 대책에 관한 목록, 베를린과 본 사이의 공정한 업무분담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이 계획안과 더불어 정부기능의 이전이 의회의 이전과 시간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992년 8월 25일 연방정부는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확장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방정부는 본 지역에 대한 보상조치를 협약을 통해 입법화할 계획이다. 의회와 정부가 이전하는 시점을 기해 1975년과 1990년에 작성된 현행 수도관련 합의사항과 1991년 6월 20일자 연방의회 결의기준에 맞추어 이러한 보상조치를 하나의 본 협약 (Bonn-Vertrag)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4. 연방주의 위원회

1991년 6월 20일자 독일 통일 달성에 관한 연방의회 의결을 근거로 구성된 초당적인 연방주의 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연방주의 위원회는 신연방주를 특별 배려하면서 국가기관과 국제기구의 분산배치 건의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1992년 5월 27일 연방 소속 기구 및 연방 기구의 일부 등 총 15개 기관을 신연방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 위원회는 의회와 정부의 이전에 따르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연방기구를 본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는 연방정부의 안에 동의하였다.

IV. 신연방주의 행정체계 구축

1. 통일이전의 상황

동독의 공공행정은 기초자치단체(Gemeinde)와 지방군(郡, Landkreis)을 제외하면 모두 중앙집권적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동독은 가입과 동시에 국가로서 멸망되었기에 동독지역의 행정이 기본법의 관할규제에 적용하도록 통일조약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공공행정에 필요한 기관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에 귀속되었다. 동독의 서독가입, 즉 통독과 함께 더이상 공공행정 임무수행에 필요없게 된 기관들은 정리대상으로 해체되었다. 통일조약 제13조 의정서 성명문에 따르면 정리관할권은 내용의 전후관계상 일종의 공공과제이다. 만일 이러한 관할권이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정리관할권을 행사하였다.

통일조약은 이와같은 법적 장치와 함께 공공행정의 구조에 관한 기본법의 우수성이 신연방주에 도입되도록 결정해 놓았다. 그 결과 능률적이고, 우수하며 법치국가적 요건에 맞는 공공행정을 동독지역에 신속하고도 무리 없이 구축하기 위한 조직상의 제반여건이 갖추어졌다.

2. 연방행정체계의 구축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에 대한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는 연방자체 행정구축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론 신연방주 자체 행정에도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1990년 10월 3일의 가입시 200개 이상의 기관이 (철도, 체신, 국방분야를 포함하면 4,000개 이상의 기관) 560,000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연방정부로 이관되었다.

2.1. 연방 재산 관리행정

동독에는 연방재산관리청에 필적하는 행정기관이 없었다. 단지 산림행정

에 있어 구동독 인민군 군용임업에 관계되는 기관이 약간 있었을 뿐이다.

이미 1990년 6월, 인민공유재산의 사유화 조치에 따라 연방기관 배치용 부동산 및 군사훈련장과 같은 국가전체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부동산에 관한 목록이 작성되었다. 앞으로 재산관리행정의 관할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소련군의 부동산 이용에 관한 회담이 개최되었다. 동독이 멸망하기 전 동독재무부는 15개 지구(地區, Bezirk)전담관을 위촉하여 연방재산관리청의 전문 공무원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정부에게 귀속될 모든 부동산을 파악토록 하였다. 1990년 10월 3일 발효된 연방재무성의 부령을 통해 구동독 지구(地區) 단위마다 하나의 연방재산관리청이 설치되었다.

동독정부에 의해 임용된 부동산 파악 현전담관은 연방재산관리청에 영입되었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서독 출신 직원에 의한 대대적인 행정지원이 있었다. 동독인민군 산하 산림 행정 요원 일부가 인수되었다. 동독의 산림 관계기관은 연방산림행정 관계기관으로 통합되었다. 그 결과 동독인민군과 소련군이 사용하던 부동산에 217개 삼림구역을 관할하는 33개의 연방산림청이 신설되었다.

1990년 10월 3일부로 연방재산관리청의 관할영역으로 이관된 구 동독인민군 주택 관리청은 1991년 현재 조직상으로 완전 통합되었다. 동독의무부와 동독수상실이 소관하던 부동산 관리분야 역시 인수되었다. 연방재산관리청이 신연방주에서 수행하는 핵심과제는 a) 연방군에 의해 자유재량 처분 대상이 된 구동독 인민군 부동산 (그 중에는 다수의 대형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음)과 총 65,000 동의 구동독 인민군 주택의 인수 및 매각, b) 소련군 서부주둔군이 철수한 부동산의 인수 및 매각, c) 구 인민공유재산의 연방귀속 시 연방정부의 권익수행, d) 재정재산의 관리 및 매각 (통일조약 제 22조 (1)항 관련), e) 소련군 및 CIS 주둔군에 의해 야기된 주둔피해에 대한 보상, f) 연방기관 근무자용 주택 마련 (예: 임대주택용 용자를 통해), g) 더이상 행정용으로 불필요한 기타 연방부서 소유 부동산의 인수 및 매

각 등이다.

상급재정관리국장의 재산귀속법에 입각한 결정 준비, 특히 투자에 필요한 부동산 반환신청서에 대한 결정조치가 특수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같이 방대한 임무수행 결과, 1993년 가입지역에서는 약 4,500명에 달하는 인력이 채용되었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구연방주와 맞먹는 것이다.

2.2. 관세행정

1990년 7월 1일 화폐·경제·사회통합이 실시되기 전까지 동독에는 적절한 관세법과 소비세법이 없었다. 관세행정은 주로 대외무역의 일환인 수입허가 및 수출허가, 우편교류 및 여행교류와 관계되는 금지사항과 제한사항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공과금은 징수되지 않았다.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신연방주내 관세법과 소비세법의 이행책임은 연방재정행정기관인 연방관세청으로 이양되었다.

상당수의 동독세관 직원들이 인수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교육, 구서독지역 세관에서의 실무중심 근무, 서독주로부터의 대대적인 전입 등을 통해 신속하고 괄목할만한 초기성과가 달성될 수 있었다.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제2단계로서 각 신연방주에 연방재정행정과 주재정행정의 중간기관인 고등재정관리국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현재 가입지역의 관세행정에는 7,200명에 달하는 직제가 신설되었으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3년 1월 1일 현재).

- 5개 관세·소비세국 (Cottbus, Rostock, Chemnitz, Magdeburg, Erfurt). 단 동베를린은 베를린 고등관세구역에 포함.

- 20개 중앙세관, 90개 세관, 19개 세관원 파견관실
- 5개 관세위반적발소 및 7개 지소
- 동베를린 연방금고 (가입지역 전체를 관할)
- 중앙연수원 (Plessow 소재)

이로써 신연방주의 관세행정의 구조는 완성되었다. 그러나 내적 행정구축에는 아직도 조직, 건축, 인력 면에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더우기 독일 - 폴란드와 독일 - 체코 국경통과소의 확충은 국경통과 교류업무의 신속화 및 효율적인 밀수근절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2.3. 수운 및 해운행정

기존 전문행정기관은 이미 가입 이전에 동독교통부와 합의한 후 수운 및 해운행정에 관한 규정에 알맞게 재편되었으며 1990년 9월 28일자 연방교통부령을 통해 1990년 10월 3일부터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베를린지역 중점과제 처리를 위한 수로국과 Stralsund, Magdeburg, Brandenburg, Eberswalde, Lauenburg, Berlin, Dresden 지역에 수운국이 신설되었다. 수운 및 해운행정의 중점과제 처리를 위해 Rostock과 Berlin에 외청이 설치되었다.

3. 주 행정체계의 구축

3.1. 통일이전의 상황 및 발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신연방주의 형성, 주의회의 구성이 끝난 다음 범치국가적 업무를 수행할 능률적인 공공행정기관의 구축이 신연방주에서는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이에 연방정부와 서독지역주들은 일찌기 집중적으로 참여하였다.

주 행정체계 구축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동독의 멸망 당시 주가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지구(地區)(Bezirk)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인력만이 당분간 활용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구동독 공산정권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구축에 적절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대다수의 연방정부 및 구연방주 출신 공직자들이 신설되는 신연방주로 전임되었다. 임시 주정부를 대표하는 5개 신연방주의 주정부 대변인 선임과정에서부터 연방정부와 구 연방주 직원 다수가 협력하였다. 이러한 협력사례는 주정부가 구성된 뒤에도 각 부서를 신설하는 재건단으로서 계속되었다. 기존 현행정기관에 잔류하면서 협력하는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특히 연방정부와 자매주 출신 전문 부서 직원들이 자문역으로 활동하였다.

1991년 이래 행정구축업무의 주된 과제는 구연방지역의 자매주에 의해 수행되었다. 특히 사법행정 및 조세행정과 같은 중점분야를 비롯하여 일반행정 등에 걸쳐 장기 전보발령, 단기 파견근무, 공무출장 등을 통한 대대적인 인력지원이 뒤따랐다. 이에 병행하여 자문활동, 교육훈련, 연수교육, 신연방주 행정요원에 대한 추가 직능인정조치 등이 점차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방정부는 주 행정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이외에 특히 “행정지원을 위한 조직정비처”를 설치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직정비처의 기능에 관하여서는 제 VII.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3.2. 조세 행정

신연방주에서도 우수한 조세행정이 구축된다는 것은 확대된 독일의 국내시장이 통일된 경제조건을 갖추는 중대 전제조건임은 물론,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증가된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중대 전제조건이다.

동독의 국가예산 재원조달에는 세금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세무서가 없었다. 동독법에 따라 세금과 공과금을 관장하던 지구(地區)와 군의 재정부에 근무하던 인력들에게는 필요한 조세전문지식이 없었다. 우수한 조세행정을 위한 물질적 여건도 갖추어 있지 않았고 자동화에 의한 지원이란 오로지 세금과 공과금의 징수시 사용된 금전등록기뿐이었다.

1990년 7월 1일자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동시에 설치된 120개 세무서는 “전무상태”로부터 설립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연방재무부와 구연방주 조세행정기관은 인력지원과 물적지원을 대대적으로 행했다.

오늘날 신연방주내 각 세무서에는 구연방주 출신의 노련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연방재무부는 조직, 자동화, 교육훈련 및 연수교육 분야에 걸쳐 각종 연방 - 주정부 활동단을 조정 내지 지도하고 있다.

불과 3년안에 구축된 조세행정기관은 주요 구조가 갖추어져 핵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이룩되었다. 다음과 같은 성과를 열거해 볼 수 있다.

- 우수한 고등재정관리국을 구축하여 산하 세무서에 대한 직무감독을 수행
- 세무서 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지식의 전달
- 자체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중급직과 고위직 신입공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개시
- 5개 전산본부의 설치와 필요한 사무자동화 인력의 훈련을 통해 자동화 지원을 추진하고 1992년 1월부터 통합식 자동화 세금책정방법 및 세금징수방법을 도입
- 매상세 특별검사 및 근로소득세 대외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 탈세법 적발근무의 강화

4. 기관의 통·폐합

동독의 수백여 기관의 존속 또는 해체문제는 1990년 말까지 결정이 취해져야 했다. 그러나 통일조약에 각 분야별 해당규정이 내포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전문적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했다.

전문성을 초월하는 합의사항은 “행정지원을 위한 조직정비처”를 비롯하여 연방내무부에 설치된 조직정비 실무단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체대상 동독행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의해 인수될 수 없는 직원들에게는 노동촉진법에 따른 노동행정용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통일조약은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고용주가 노동행정당국과 함께 재임용 또는 연수교육 또는 직업전환교육대책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V. 法治主義 司法의 확충

1. 1989년말 이전의 상황

1.1. 맑스레닌주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에 따른사법의 기능

舊동독의 司法制度는 사회주의 국가내의 재판의 체제내적 역할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 주요특징은 맑스레닌주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에 준거하여 법과 司法의 독립성이 부정된다는 점이다. 법과 사법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적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법과 사법은 모든 다른 국가행위와 더불어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지배하에 있었다. 즉 사법재판은 제 3의 독립적 권력이 아니었다. 그러한 독립적 권력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존립할 수 없었으며, 사법재판은 당의 지시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법관의 인적 독립성도 인

정되지 않았다.

법관들은 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 그 임기는 차기선거시까지이며, 법관들은 인민대표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법관의 재판독립성은 실무상 널리 뿌리박힌 국가의 통제와 감독에 의해 사실상 부인되었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관할권의 可變性으로 인해 사실상 空同化되었다.

1.2. 법원의 관할조직

법원은 3 단계로 구성되었고, 지방행정관할구분과 일치되도록 조직되어 있었다. 1 개 郡마다 하나의 郡법원 (Kreisgericht), 1 개 地區마다 하나의 地區법원 (Bezirksgericht)이 설치되어 있었다; 舊동베를린에는 구동독의 최종심급법원인 最高법원 (Das Oberste Gericht)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법원들은 일종의 “종합법원” (Einheitsgericht)으로서 사법기관으로 이송된 모든 사안들을 관할하였으며 제 1 심에서는 보통 평민판사 (Laien 參審판사)들이 民事, 家事, 刑事, 勞動사건 등에 함께 관여하였다. 行政법원에 의한 국가 공권력에 대한 권리보호는 1989년의 첫째번 보고서들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았다 (부록 Nr. 7 과 Nr. 20 참조).

최고법원은 사법재판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외에 법무부와 共助하여 舊동독의 모든 하위법원들을 지도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최고법원의 지도권한은 때때로 구속력을 지닌 “지도노선”(Richtlinien)의 형태로 행사되곤 하였다.

郡법원의 하위법원으로 郡법원의 지도를 받는 소위 사회적 법원들 (Die gesellschaftlichen Gerichte)이 회사나 주거지역에 분쟁위원회와 중재위원회 (Konflikt- und Schiedskommission)의 형태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평민사법제도 (Laienjustiz)는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형사사건이나 노동사건 중 수많은 작은 분쟁사안들이 동 법원의 관할에 속하였

으며 단순한 민사분쟁이나 질서위반사건 또는 就學義務위반사안들도 동 법원에 의해 취급되었다. 이러한 분쟁사안들은 사회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 항소하는 경우에만 통상의 국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이외에도 이른바 경제기관들간의 중요한 분쟁사안을 중재법원의 재판절차와 유사한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소위 “국가계약법원”(Staatliche Vertragsgericht)들이 존재했다.

舊동독에서의 검찰은 특수한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휘하에 있지 않았고, 인민의회(Volkskammer)와 국가평의회(Staatsrat)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민의회총회와 국무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었다. 검사는 단순한 刑事司法의 일 기관이나 수사의 주재자에 그치지 않고 민사사건이나 노동분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 즉 그에게는 일반적인 “법률감독”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

1.3. 법관과 검사의 數

舊동독에서 사법부가 차지하던 존재의 미약성은 법관의 수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구동독에서는 약 1,500명의 법관, 즉 1백만명당 약 90명의 법관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반면 통일전 서독에서는 약 18,000명의 법관, 인구 1백만명당 약 280명의 법관이 사법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반면 검사의 경우 舊동독에서는 인구 1백만명당 약 80명의 검사가 있었던 반면 서독은 약 60명의 검사가 있었다 (부록 Nr. 8 참조).

1.4. 법조인 교육

구동독의 법조인 교육은 독일 연방공화국의 법조인 교육과 큰 차이가 있었다. 舊동독에서는 법학 전공 대학생의 수가 국가의 수요에 의해 좌우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처음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매년 약 700 명의 학생들 (그중에 일부는 방송수업학생이었음)에게 법

과대학입학이 허가되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법학교육은 “총체적 법조인”(Einheitsjuristen)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法曹職분야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소질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반면에, 舊동독에서의 법학교육은 대학교육과정에서부터 특정한 法曹職에 맞게 세분되어 이루어졌고 특정한 직업활동을 위한 국한된 능력을 키워주는데 목표를 갖고 있었다. 4년제로 되어있는 대학교육과정에는 법률학이외에도 막스레닌주의와 정치경제학, 또한 그 외의 이념관련 기초학문 등 많은 비법률과목의 이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정통으로 간주되고 승인된 견해들, 즉 국정단일교과서와 부합하는 학설들만이 教授되었다. 학문연구의 특징으로 표시되는 이른바 독창적인 문제의 해결과 독자적인 논리의 전개 그리고 기존학설에의 비판과 논쟁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적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었다. 대학과정에 이어 1년간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나 공증인으로서 실무교육을 더 받음으로써 특정 法曹職에 종사할 수 있는 국한된 능력이 전수되었다. 전문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할 실질적인 시험은 결여되어 있었다.

1.5. 사법보조관

구동독에는 사법보조관(Rechtspfleger)이라는 직업이 없었다. 사법보조관의 임무중에 많은 부분이 특히 非訟사안의 경우에는 일부는 행정관청에 의해 또 다른 일부는 국가공증소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법부내에는 판사와 검사외에 법원비서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임무가 부분적으로 사법보조관, 수수료원, 문서담당관리 또는 집달리의 그것과 유사하였다 (부록 Nr. 9 참조).

1.6. 변호사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제한되었던 舊동독에는 당연히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약 6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었고 (서독에서는 약 55,000명), 모든 변호사가 각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각 地區 변호사회에는 그 지구내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변호사회는 소속회원들을 감독하고, 사무실과 인적자원을 제공하며, 변호사비를 수거하고, 소속회원들의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며, 소속회원들의 의료보장과 노년대책의무를 부담하였다. 변호사회의 지출비용은 변호사비중에서 각출되었다. 몇몇 소수 변호사들만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自營業者로서 변호사 활동을 했다.

1.7. 부수법률사무

대부분의 부수법률사무들이 법원이 아닌 국가공증소에서 수행되었다. 국가공증소에는 국가에 의해 임명된 약 500 여명의 공증인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舊동독에서 자유직으로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던 공증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1.8. 법원조직법과 소송법

舊동독에는 서독측과는 성질이 다른 법원조직법과 소송법, 특히 1권으로 된 민사 및 형사소송규칙이 있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 1877년의 제국사법률 (Reichsjustizgesetz)의 영향은 극히 일분야에 국한되어 남아있었고, 주요부분에서는 소련식 법규의 영향하에 있었다.

1.9. 行刑

행형은 내무성 (MdI)의 관할에 속했다. 舊동독 인민경찰의 사무국이 행형기관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다. 반면 법무성은 행형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

행형제도는 행형기관내 안정과 질서유지의 강조 및 군대식 위계질서의

식에 의해 특징지워졌다. 이는 예를 들어 건물밖에 맹견들을 풀어 놓아 죄수들의 탈출을 막는 식으로 형무소장벽의 안전을 추구한다거나 일반적으로 형무소를 연상나게 하는 색(황, 적색)의 줄무늬 옷을 죄수들에게 입히는 형태로 드러났다.

죄수들에게는 또한 억압적인 행형조치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31 개의 成人 형무소, 5 개의 소년원, 37 개의 구치소 그리고 8 개의 국가보위부(MfS)소속 구치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행형기관의 수용능력은 약 25,800명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989년 가을 현재 평균 약 30,000명의 受刑者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구동독내 정치개혁과정에서 2번의 사면조치가 있었고 그후 계속된 상황발전으로 인해 1990년 가을에는 수형자의 수가 약 3,500 명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감소결과를 가져왔다.

2. 제반 법상황의 발전

2.1. 통독 이전의 제반 법상황의 발전

兩獨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法律과 사법현실의 同化가 처음부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독립적이고 제 3의 권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는 판결, 그리고 국민에게 납득되어 지도를 선고되는 판결은 법치국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중의 하나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舊동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권리를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제 1차 국가조약에서 이미 일반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自主國家로서 舊동독의 존립이 장기간 가능해 보였고 또 이로 인해 일반원칙의 범위안에서 舊동독의 자주적인 사법권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1차

국가조약은 제 6 조의 조약상의 기본언명과 함께 指導文을 작성하고, 자유경선된 舊동독 의회가 실현하기를 원하는 규정들과 목표이념들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중앙집권적 체제내에 있어서의 사법의 도구적 성격을 배제시키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개념들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죄형법정주의”)을 삭제하고 검사의 일반적인 법률감독, 주기적인 판사선거, 중앙에 의한 사법지배, 판사의 報告義務 그리고 검찰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폐지하는 것이 그 案에 규정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公法상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職權訴訟 요소들을 민사소송에서 분리시키며 변호사업무의 요건과 전제조건을 자영업자의 그것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舊동독에 일종의 특수 노동재판권이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잠정적으로 勞使間의 분쟁을 판단할 중립적인 社內 노동분쟁중재소를 설치하게끔 하였다. 이 중재소에 대한 규정은 1990년 6월 1일 서독 노동법의 주요내용들 (임금교섭법, 회사조직법, 공동결정법, 해고보호법)이 적용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제정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체법들은 재판권의 존립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민간경제부문과 공공업무 부문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해고와 관련하여 많은 노동법적인 분쟁이 발생되고 또 이것은 바로 법원의 소송부담가중으로 이어질 것이 예견되었었다.

舊동독은 이상에 언급된 제 1차 국가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즉 서독측의 법무성과 노동성 직원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司法에 연관된 법규들을 개정했고 서독측의 법체계에 同化시켰다. 동독의 소송법률들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었고, 공법상의 광범위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졌으며, 자유 변호사와 自營 공증인을 위한 첫번째 근거규칙들이 공포되었다. 나아가 시장경제주의적 파산법의 원칙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구동독 법규정들, 부록 Nr. 10 참조). 판사들과 검사들의 재임용은 그들의 과거체제에 대한 연루정

도에 따라 판단하기로 기본원칙이 확정되었다. 이를 위해 판사법과 그에 상응하는 검사규정의 제정 그리고 민주적으로 합법화된, 독립적인 판사선출위원회와 검사선임위원회의 구성이 예정되었다. 그 위원회는 판사들과 검사들 중에 선출된 자들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들은 舊동독의 연방가입 이후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비교. 아래 4.4). 同 위원회에 의한 판사와 검사의 직업활동심사 결과 부정적인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임용은 배제되었다.

2.2. 통일조약

통일조약의 체결과정중 사법분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점은 가능한한 장애없이 앞으로의 法同化를 이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과규정 및 임시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체계의 창설을 위해 舊동독 법체계의 개개 요소들을 신설 5 개주를 위한 연방법의 일부분으로 유지하고자 했던 舊동독의 의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1990년 초에 이미 법무성내 실무단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시 1990년 여름 끝 진행될 재통일을 염두에 두고 재구성된 “사법개혁을 위한 주제들”을 참조할 수 있다 (사법개혁을 위한 주제들과 “新司法制度”, 부록 Nr. 11 과 Nr. 12 참조).

통일시 서독측의 전체법률체계를 동독지역에 완전하고도 즉각적으로 확장 적용하는 것은 단기간내 변화가 불가능한 신연방주 지역의 司法현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질과 양에 있어서 불충분한 인적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기간중에도 사법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체계적으로 계통화되고 분리된 서독측의 법원체계를 신연방주 지역에 즉각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특히 구동독측의 특수한 판사법적 상황을 고려할때 불가능하였다.

거의 봉합자국없이 이루어진 전환은 오직 최종심급기관과 연관된 분야에서만 가능하였다; 구독독의 최고법원은 폐지되었다; 연방최고재판소는 연방가입과 동시에 독일연방 전 지역, 전 분야에 걸쳐 소송법률에 의해 이송된 사안들을 접수하며, 특히 上告 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구독독의 대검찰청도 폐지되었다. 본래의 의미에서의 그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한 관할권은 각 지구법원의 검사들에게 양도되었다.

통일조약내 사법제도분야를 위해 제정된 경과규정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헌법상 근거지워져 있고 실체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절차법,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몇몇 불가피한 규정들을 제외하고 가입 첫날부터 광범위하게 확장적용되어야 하나 舊 동독측의 법원구성 (다만 최고법원은 제외)은 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민사재판과 家事事件재판에 있어서의 區법원(Amtsgericht)과 지방법원(Landgericht)의 제 1 審級 업무는 郡법원(Kreisgericht)이 넘겨 받았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郡법원이 주로 區법원의 역할을 감당했다.

地區법원(Bezirksgericht)은 민사재판과 가사사건재판에 있어서 항소심 및 항고심기관으로서의 지방법원(Landgericht)과 州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州수도 所在 地區법원의 특수재판부는 고등법원의 필수업무를 맡았다. 재판부구성은 인적자원의 절약정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감소되었으며 항소가능성이 제한되었다. 독립적인 전문법원의 재판권, 즉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에 의한 재판권은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사법과제는 우선 郡법원과 地區법원의 특수 재판부에서 집중적으로 나루어졌는데 물론 그 재판절차는 그에 상응하는 재판절차규정에 준하였다. 통일조약은 신연방州에 대해서 州법률에 의하여 특수재판권을 분류하고 나아가 조건이 성숙하여 있다면 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베를린에 대하여 통일조약은 현존하는 법원의 관할권을 市の 동부지역에

확장하도록 하는 특수규정을 두고 있다.

非訟사건분야는 실무상의 이유로 인해 토지등기사안을 우선 국가부동산청에서 처리했던 이전의 사법제도로 돌아갔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 5 장 II.3.2.6 참조). 비송사건사안들은 그 중 대부분이 소위 사법보조관들의 업무에 속하는데, 구동독에는 이와 같은 사법보조관이 없었기 때문에 통일조약은 사법보조관의 업무를 그가 아닌 적합한 者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시 판사나 검사직에 있던 者는 통일조약에 따라 우선 판사나 검사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그가 판사선출위원회 (Richterwahlausschuß)나 검사선임위원회 (Staatsanwaltsberufungsausschuß)의 소정의 심사를 받을때까지만을 의미한다. 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판정을 받으면 일단은 시보 또는 임시 판사나 검사로서 명하여진다. 더 나아가 통일조약은 舊동독법에 의해 획득한 검사자격증 또는 판사자격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舊동독이외의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법학디플롬 (Diplom-Jurist)으로서의 졸업에 대해서는 제 1차 사법시험의 합격 (Das erste juristische Staatsexamen)에 준하는 인정을 하고 있다.

명예판사와 재판소장등의 선발과 임명에 대해서도 기본법 신규정 제 143조 원칙하에 예외적인 편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기본법 제 143조는 사법분야에 있어서도 1995년 말까지 헌법상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정들을 적용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미 1990년 9월 舊동독의 인민의회에서 제정된 변호사법은 서독측의 법을 전형으로 삼고있다. 同법률과 舊동독에서 제정된 自營공증인의 활동에 대한 규칙의 계속적인 同化에 대해서는 통일조약이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및 공증인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안건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기까지는 相異한 직업관계법률들이 각각 일정지역에만 효

력을 갖는 연방법으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변호사의 이주자유는 허용된다.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재판비용 및 수수료관련법규와 관련하여 통일조약은 신연방주에 대해 일반적으로 20%의 差額을 규정하고 있다.

파산법(Insolvenzrecht)과 관련하여서는 舊동독에서 1990년 6월 발효되고 다시 1990년 7월 개정된 總執行規則(Gesamtvollstreckungsordnung)이 신연방 5개주에 계속 적용되기로 합의되었다. 개정의 필요성이 매우 큰 서독의 파산법규정을 신연방주 지역에 확장적용하는 것은 배제되었다.

2.3. 통일 이후의 제반 법상향의 발전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신연방주에도 가능한 한 빨리 서독지역과 같은 법원체계를 창출하여야만 했다. 司法분야와 관련된 연방과 각 주의 입법권자의 작업은 이러한 목표를 중점에 두고 행해졌다. 이 작업은 그사이 많은 진전을 보았다. 그리고 많은 州가 區법원 (Amtsgericht)과 지방법원 (Landgericht)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법원관할구역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특히 지구법원 (Bezirksgericht)에 비해 지방법원 (Landgericht)의 수를 늘렸으며, 하위법원 (Kreisgericht/ Amtsgericht)의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독립적인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그리고 사회법원의 설치를 통한 전문재판권 (Fachgerichtsbarkeit)의 분리는 1992년말까지 대부분 완료되었다. Thüringen州에서는 1993년 8월 20일 재정법원과 사회법원에 의한 재판권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Mecklenburg-Vorpommern州, Sachsen州, Sachsen-Anhalt州에서는 이미 입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법원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체계 (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Thüringen州에서는 1993년 8월 1일에 성취되었다; Brandenburg州에서는 1993년 12월 1일자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상화”로의 과정, 부록 Nr.13 참조).

1992년 6월 26일자 司法同化法 (BGBl.I S.1147)은 신연방州에서의 전문재판권의 분리와 법원정상화과정이 큰 알력이나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마련하였다.

서독지역을 기준으로 신연방州의 사법률동화작업을 하는데는 신연방州의 주법상의 법률보완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한 작업이 그동안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일부는 법제정을 통해서 또한 일부는 쏘연방적으로 단일화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992년 7월 24일자 변호사면허, 공증인임명, 명예판사의 선임에 대한 심사를 위한 법률 (BGBl.I S.1418)은 정치적 책임이 있는 변호사, 공증인, 명예판사들을 면직시키거나 그들의 계속적인 직업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는 1993년 1월 11일자 사법부담완화를 위한 법률 (BGBl.I S.50)을 들 수 있다. 同 법률은 서독지역의 법원조직법과 소송관계법률들을 개정하여 신연방州의 司法再建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제 1차 목적으로 삼고 있다 (司法律에 대한 중요한 法原들, 부록 Nr. 14 참조).

3. 1989년 가을부터 통일시까지 사법분야의 변화

3.1. 사법제도의 變形

1989년 가을의 정치적 변혁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1990년 1월의 구동독 사법제도 變形은 다음 사항들을 통해 특징지워진다:

- 국가보위부(Staatssicherheitsdienst)와 刑事司法機關의 共助사실이 밝혀

짐에 따라 법원에 대한 점증적인 여론의 압력 (Dresden-地區법원내의 데모),

- 시민들의 신뢰상실과 사법관계자들의 직업적 장래에 대한 염려와 방향 상실로 인해 몇몇 대도시법원들 (Dresden, Berlin, Rostock, Leipzig)에 서 일어난 司法業務停止,
- 법질서의 변경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생겨난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지구법원의 “정치적” 특별형사재판부 (소위 1a-재판부)는 폐지되었다. 직업적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판사, 검사 및 그외의 사법관련 종사자들의 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했다.

3.2. 변호사와 국가공증인들의 증가

舊동독은 1990년 2월에 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소정의 교육조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1991년 초까지 약 1,500명의 신청자가 이 가능성을 이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 6월에는 그 당시 약 500 여명의 국가공증소 종사자들에게 자영업자로서 공증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는 규정이 제정되었다. 약 350 여명의 공증인이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3.3. 형사판결 재심위원회

1990년 가을 舊동독정부의 사면조치를 받지 못한 受刑者들이 刑免訴 또는 刑期단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구동독 국무총리는 1990년 10월 2일 판결들을 재심하고 수형자들의 법률구제가능성에 대해 상담할 독립적 위원회의 설치명령 (부록 Nr. 15 참조)을 발하였다. 同 위원회는 1991년 중순까지 약 1,700 사안을 심사하였다 (독립적 위원회, 부록 Nr. 16 - 18 참조).

3.4 人的支援

舊동독은 제 1차 국가조약에 의해 행정, 재정, 사회, 노동 재판권분야의 법익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주어졌지만 애초부터 이에 상응한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서독지역에서 특수재판권 관련 판사들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公法的 재판권 분야에서는 법원에 의한 법익보호에 대한 수요가 당장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파견판사들”은 자신들의 업무 과제이외의 분야에서 많은 조언을 함으로써 司法再建작업에 동참하였다.

통일조약 제 15 조에 따라 신연방주의 州政府 구성시까지 현재의 “州代辯人”(Landessprecher)과 소속직원들은 연방정부의 책임과 지시하에 지금까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였다. 연방법무성은 이에 따라 신연방주의 재건 담당기관 및 그 協助州의 해당기관들과 상세한 대담을 가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연방주에 대해 여러가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예를들면 1990년 10월 3일까지 구동독의 법원들이 최소한의 보조자료들 (법전과 서식용지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3.5. 補充教育

서독의 법률교육을 받지 않은 舊동독 출신 판사들과 검사들 (법학 디플롬 학위를 받은자)에 대해서는 우선 재판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수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보습교육과정은 그들 모두의 궁극적인 재임용을 목표로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판사선출위원회와 검사선임위원회의 심사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6. 非訟事案

어려운 문제가 비송사건분야, 특히 토지등기부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에서

점증하였다. 왜냐하면 舊동독에는 없었던 사법보조관과 법원집달리의 부족을 짧은 시일내에 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장 4.9 및 4.10 참조).

4. 통일 이후의 신연방州 司法 發展

4.1. 접수사건의 증가

연방가입이후 신연방주의 사법제도는 본질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원래 서독지역에 비해 경미했던 접수사건이 연방가입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는 더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서독지역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우기 동독지역에는 再審申請度가 낮았다 (부록 Nr. 19 참조).

한 가지 예외적인 현상은 노동소송사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서부지역 수준을 훨씬 초과하였다는 점이다. 解雇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분쟁으로 인하여 1990년 10월 이후 노동사건관련 재판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서독지역수준을 높이 상회하고 있다 (부록 Nr. 19. 참조).

노동사건이 고도의 사회정치적 비중을 지니고 있음이 무엇보다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까지 신연방주의 법원에 의한 소송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분명해진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원의 재판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연방과 서독지역주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법원의 접수처리상황은 점차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부록 Nr. 20 참조).

그러나 통일로 인해 생성된 특수한 문제들, 즉 형사법상의 과거청산과 복권문제들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업무의 한계선에 봉착한 신연방주 지역의 司法업무에 추가적인 어려운 과제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제 4 장 II 와 III) .

4.2. 州司法行政의 재건과 자매결연

신연방州的 재건준비를 위해 창설된 再建府 (Aufbaustab)는 미래의 법무성의 모태이기도 했다. 서독지역의 州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장래의 신연방주들을 위해 자문과 실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Brandenburg州를 위해서는 Nordrhein-Westfalen州, Sachsen-Anhalt州를 위해서는 Niedersachsen州, Mecklenburg-Vorpommern州를 위해서는 Schleswig-Holstein州와 Bremen州 그리고 Hamburg州, Thüringen州를 위해서는 Hessen州와 Rheinland-Pfalz州가, 또한 Sachsen州를 위해서는 Baden-Württemberg州와 Bayern州가 각각 그 자매결연을 맺었다.

재건부는 자매州的 도움을 받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 기능을 갖춘 부서로 탈바꿈되었다. 부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재건부의 인력상황이 예를 들어 1993년 1월 1일 현재 적게는 Sachsen-Anhalt州의 123명에서 많게는 Brandenburg州의 164명까지 증가되었다 (인적증가, 부록 Nr. 21 참조).

4.3. 협력과 경험의 상호교환

市동부지역 사법체계를 인수받은 베를린州와 신연방州的 실제적이고 법률적인 사법행정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법무성은 베를린 支部에 상설 상담소를 설치하였다. 이곳에서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법분야에 대한 의견과 경험의 상호교환이 연방법무성의 협조적인 主宰하에 이루어졌다. 신연방州的 司法에만 전적으로 적용되거나 또는 그것과 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법률규정들에 대한 작업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4.4. 판사와 검사

완전히 기능을 갖춘 司法 - 사법행정도 포함하여 - 의 재건은 서독지역에서 파견된 법조인들의 협력없이 실현될 수 없었다. 서독지역출신 新任 법조인의 기용이외에도 필요한 업무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경험많은 판사, 검사 그리고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신연방州내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혜택들이 마련되었다.

1993년 1월 1일 현재 신연방州에서 활동중인 판사와 검사는 각각 2,273명과 941명이었다 (부록 Nr. 26 참조). 이 숫자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긍정적인 판정이 내려 시보 또는 임시판사나 검사로 司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법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舊동독출신 판사나 검사중 단지 1,889명만이 동 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으며 (도표, 부록 Nr. 27 참조) 심사결과 그 중 1,094명 (= 58 %) 이 판사나 검사로 재임용을 받았다. 이러한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된 舊동독출신 판사와 검사는 지금현재 동독지역에서 활동중인 총 법조인의 약 28 % (판사) 와 약 40 % (검사)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 판사들은 서부지역에서 새로 임용된 법조인들 (약 37 %) 과 서독 각주에서 선발되고 파견된 판사들 (약 31 %) 로 구성되어있다. 검사의 경우는 서부지역에서 새로 임용된 법조인의 수가 33 %, 서독의 각주에서 선임되고 파견된 법조인의 수가 24 %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미 퇴직한 판사, 검사 그리고 사법보조관의 임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소위 “年長者모델”(Seniorenmodell)에 의해 임용되어 1993년 4월 1일 현재 신연방州에서 근무중인 판사와 검사는 각각 66명과 8명이다. (부록 Nr. 28 참조).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재판소 그리고 연방대검찰청은 독일통일에 따라 同 기관에 근무중인 학술보조원을 늘리고 재판부 (Senate)를 증설하였다

(부록 Nr. 29 참조). 신연방주의 법조인교육을 위해서는 특별조치가 취해졌다 (법조인 교육, 부록 Nr. 30 참조).

4.5. 사법보조관과 기타 고급공무원

舊동독에는 애당초 사법보조관이 없었고 서독에서는 - 전문법조인들의 경우와는 달리 - 예상수요의 범위내에서 사법보조관 직업교육을 실행했기 때문에 예비인력비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컸다. 경제재건을 위해서는 토지등기부 및 등기권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분야는 거의 모두 사법보조관의 업무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법보조관의 부족은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유사사법보조관제도(Bereichs- rechtspfleger)가 생겼는데, 이들은 사법보조관 관할업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다 (유사사법보조관, 부록 제 31 번 참조). 여기에는 舊동독출신 법원비서들도 해당되었다 (법원비서들의 임용, 부록 Nr. 32 참조).

그동안 신연방주의 사법업무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청에서) 사법보조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직원들은 약 2,200 명이다 (도표, 부록 Nr. 33 참조). 그중 약 600 여명은 서독의 각주에서 선발되어 파견된 사법보조관들이다. 신연방주에서는 그 사이에 자립적으로 사법보조관 (사법보조관법 Nr. 2 조)을 양성하기 시작하였다 (사법보조관교육, 부록 Nr. 34 참조).

4.6. 기타 司法종사원

접수창구의 문서담당관과 그 밖의 중위급 공무원들중에 연방과 서독지역의 각주에서 선발되어 신연방주로 파견된 공무원의 수는 207 명이다 (도표, 부록 Nr. 28과 직업교육상황, 부록 Nr. 35 참조).

4.7. 구동독출신 사법종사원들의 補充教育

독일연방방법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舊동독출신 판사의 검사들을 위한 광범위한 補充教育조치가 필요하였다. 보충교육과정을 위한 비용의 일부는 연방정부가 감당하였다; 서독지역의 각州는 재교육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으며, 보충교육 수업과정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보충교육, 부록 Nr. 36 및 Nr. 37 참조).

사법보조관들과 법원집달리 그리고 법원접수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 대부분 서독지역의 州들의 지원하에 - 보습교육과정이 실행되었다.

4.8. 변호사와 공증인

1993년 초 동독지역에서는 약 4,000 여명의 변호사가 새로이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부록 Nr. 38 참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권익보장이 신장되었다.

통일조약에 의해 일단 自營公證人の 지속적인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신연방州에서는 공증사무를 주업무로 하는 공증인들이 생겼다. 1993년 초 공증인의 총 수가 518명에 달함으로써 인구수에 대한 공증인의 수는 서독지역의 그 비례수치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부록 Nr. 39 참조).

4.9. 非訟事案

이 분야는 동독지역의 경제부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토지등기부사안에 대해서는 제 5장 II. 3.2.6 을 참조할 것). 상업등기부와 조합등기부분야에서는 그 동안의 노력으로 일시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연방정부는 1993년 5월 27일 등기관련소송절차촉진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법률안은 토지등기부, 상업등기부 그리고 조합등기부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를 완전히 전산시스템에 의해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0. 강제집행/파산

강제집행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 왜냐하면 해당교육을 받은 법원집달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연방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곤경을 가능한 한 빨리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일정지역에 적용되는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총집행규정(Gesamtvollstreckungsordnung)은 2,000여건이 넘는 총집행소송과정에서 과도적 법률로서의 그 역할이 증명되었다. 총집행판사와 행정관들에 의해 1991년 동독지역에 “Wustrau 총집행연구협회”가 설립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정기적으로 경험의 상호교환이 이루어진다.

4.11. 司法統計

舊동독의 群법원(Kreisgericht) / 地區법원(Bezirksgericht)은 각각의 접수, 기결, 미결된 민사, 가사, 노동, 형사사안에 대한 내부적 업무조감통계서를 작성했으며, 여기에다 기결처리된 소송사안에 대한 전산통계를 보충하였는데 이러한 전산식 통계는 서독의 각주 통계와 비교할 만 하다.

신연방주의 동의하에 그곳에는 우선 단일통계서가 작성되고 있다. 이 통계서는 당장 시급한 자료처리로 인해 당분간 계속 작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 통계들은 서독지역주에서 작성되는 통계서에 점차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4.12. 行刑

연방가입이후 행형은 다시 司法의 과제가 되었다. 즉 각 신연방주는 자신

의 책임하에 사법업무를 관장하는데, 여기에는 受刑者로 하여금 장차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범죄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화하고, 또 그의 계속적인 범죄행위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해야하는 행형목표의 수행도 포함된다. 수형자는 이제 행형당국의 조치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보장받는다.

1992년 9월 30일 현재 신연방州에는 49개의 교도소가 있었다. 그 수용능력은 11,789 명인데, 同日에는 단지 4,491명만이 수용되어 있었다. 일련의 교도소들은 낮은 건축구조로 인해 또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기술적인 안전조치가 안된 곳에서의 반인권적 안전예방수단때문에 폐쇄되었다. 현존 건물의 수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新교도소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5. 기타 사항

5.1 연구프로그램

1988년에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연구프로그램인 “사법제도에 대한 구조분석”은 통일이후 신연방지역에도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여기에다 또한 “신연방 5개주의 법원조직”과 “예견되는 신연방주의 법원업무가중”과 같은 프로젝트가 추가되었다. 兩 실험연구결과는 “변혁기의 司法”이라는 著作集 (K In, Bundesanzeiger, 1993) 으로 出刊되었다. 이에 대한 요약은 부록 Nr. 40 및 41에 수록되어 있다.

5.2. “구동독의 司法制度” 展示會

연방법무성은 “구동독의 사법제도”라는 제목하의 이동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1994년부터 신연방州 및 서독지역 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신속한 과거청산과 동서독지역 독일인 상호간의 이해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충분한 현재의 연구상태로 인하여 일단 이 전시회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측면, 즉 舊동독 사회주의통일

당(SED)에 의한 司法의 도구화에 그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또한 그와 더불어 “변혁기”(Wende)의 법률생활과 사법제도등도 다루어질 것이다. 서로 상이한 동서독인의 경험축적배경을 염두에 두고 양측의 제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내리기 위하여 이동전시회는 책발간과 광범위한 부수적 프로그램 - 토론회, 강연회, 학술적인 판정, 영화상영 등 - 을 통해서 보완될 예정이다.

5.3. 州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 舊동독 법률의 문구확정과 문구교정

신연방州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연방법무성로부터 받게 된다. 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은 부록에 잘 나타나 있다 (州法, 부록 Nr. 42 참조).

6. 총평과 전망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司法權은 원칙적으로 各州들이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서독지역의 州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경험지식의 지원을 통해서 신연방州의 司法再建을 돕는 것은 논리에 맞는 일이다.

연방은 통일독일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자신이 지고 있는 전체국가에 대한 책임범위내에서 신연방州 및 서독지역 州들이 이러한 과제를 잘 해결하도록 지원하였다.

미해결된 과제와 어려움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司法統合實現에 대한 중간평가는 긍정적이다. 法的同化가 많이 진척되었다. 현재 이미 전독일에 -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미를 지닌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 동일한 실체법과 절차법이 적용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신연방州의 법원구성이 서독지역의 법원구성과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직원들의 수는 지금까지 증가하는 재판업무량에 맞게 확대되어 왔다; 건물

과 물적수요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법률상담업의 측면에서 볼때도 법에 의한 권익보장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아직까지 문제를 안고 분야에서도 조만간 그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예를 들어 舊동독 정부범죄행위와 같이 주로 신연방州와 베를린州의 司法機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양호한 발전이 이루어진데는 무엇보다 모든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재판업무량에도 불구하고 司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前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法治主義司法을 再建하고 확고히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는 신연방州들에게 계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과 성공이 司法에 대한 동독지역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신뢰성 구축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법치주의 사법에 대한 동독지역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목격되고 있다. 舊동독출신 판사와 검사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연방법률에 의해 정치적 책임과 잘못이 있는 법조인들 - 명예직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공증인들 - 의 향후 직업활동을 정지시킴으로써 法治主義司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였다.

1995년 말까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司法분야에 있어서의 규범차이가 거의 완전한 정도로 제거되어진다면 또 하나의 내적 재통일이 완성되리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VI. 공직근무

1. 통일이전의 상황

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독일 공직근무의 법치국가적 구조는 정당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협력자'라는 동독의 공직자 신분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1945년 9월 17일자 소련군정명령 제66조를 통해 소련점령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나마 1949년 10월 7일자 동독 헌법에 내포되어 있던 '공직자는 전체의 공복이지 일당의 공복이 아니다'라는 규정마저도 1968년 4월 6일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 국가기관 근무자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부응하여 기타 근로자와 다를 바 없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1977년 6월 16일자 동독의 노동법전이 철저히 적용되었다. 그러나 예컨대 동독 인민군과 인민경찰에 대한 특수규정은 있었다. 공직자 신분과 고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즉각해고를 통하거나 짧은 해고통보기간 이내에 종료될 수 있었다. 자질의 전문성에 관한 한, 후일 점차적으로 그 의의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공직신분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교육훈련이 시작되었다. 공직자는 단일정당의 의지관철을 위한 기구의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자질은 일차적으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적성과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름되었다. 이와같은 공직자의 기본자질은 정치의 권한에 한계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제도에 반영되어 당의 정치적 의지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할 뿐이었다.

통일조약을 협상할 때 동독 행정기관에 근무하던 인력의 정확한 수치는 그때까지 공식 집계된 바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무장조직', 제국철도, 체신을 포함하여 전 공직자 수는 225만 명 내지 23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동독 인구 1,600만 명의 14.5%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

시 서독 인구 6,200만 명 중 공직자 수는 군인을 포함하여 490만 명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비율은 7.9% 였다.

2. 공공행정 구조의 인수

통일독일의 공직 근무구조는 내적 통일의 완성과 신연방주 생활 평준화에 크나큰 의의가 있다.

신연방지역의 공공행정은 고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40년 동안 동독의 공산 통치가 남겨놓은 잔재를 여러가지 중요한 공공사업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의 능력발휘를 목표로 삼으면서 시민에게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고양시키는 공직근무가 수행되어야만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독일에서 자유롭고 사회복지적인 법치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필수적 기본여건이 성공적으로 갖추어 질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권리와 법률에 연계된 공직근무가 능력 본위의 원칙에 따라 공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기본법 제33조에 이와같은 사실이 공직근무의 구조로서 보장되어 있다. 공직자가 그 임무를 불편부당하게 수행하고 정당이나 단체의 지시에 따라 공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이러한 책임감과 더불어 독일연방공화국 40년사를 통해 그 우수성이 실증되었다. 1990년 10월 3일부터 직업공무원과 피고용인에 대한 공직근무의 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기본법 제33조가 가입지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3. 직업공무원제도의 도입

3.1. 공무원법의 발전

통일조약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업무의 수행은 가능한 한 조속히

공무원에게 이양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 제20조는 서독에서 그 우수성이 실증된 것과 같이 특히 능률행정의 임무수행에 공무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공식적 근거가 된다.

신연방주에게는 통일조약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까지 주(州)공무원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각 주의 공무원법이 발효되기 까지 연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통일조약에 합의된 경과규정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즉 1990년 10월 3일부터 신연방주에는 통일조약 제20조 제2항과 기본법 제 33조에 의거한 헌법적 과제에 부응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현재 대부분 신연방주에서는 주(州)공무원법이 발효되었다. Sachsen-Anhalt, Sachsen, Brandenburg 주는 이미 주 공무원법을 통과시켰고 Thüringen 과 Mecklenburg-Vorpommern 주에서는 우선 공무원법 임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부록 Nr. 43 '신연방주 주 공무원법의발전 및 현황' 참조).

신연방주는 공무원법의 제정은 물론 과도기적으로 유효한 법률의 적용문제 등에 걸쳐 연방 내무부장관 산하의 연방 - 주 합동 실무단 (Bund-Länder-Arbeitsgruppe)으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았다.

공무원의 재임용, 봉급, 원호 등에 관한 주요 경과규정은 통일조약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연방 법률규정으로 마련되었다. 예컨대 가입지역 공직자 출신 지원자가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임용될 때 시보기간이 필요한 것과 같은 규정을 들 수 있다.

통일조약의 경과규정은 1996년 말까지 적용된다. 그 이후 신연방주 출신이 공무원으로 지원할 경우, 경력상 자질이 아직 미달될 것이 통례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부족한 자질은 난이도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최소한 만족시킬 경우, 그 직책에 대한 시보기간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

출신이 아닌 지원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력지원자가 임용될 때까지 경과규정이 준용된다. 1991년 1월 9일 연방내무부장관은 시보기간과 연령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했다.

통일조약과 함께 연방봉급법(BBesG) 역시 신연방주에 도입되었다. 신연방주의 특수한 신분관계는 경과규정을 통하여 정황이 참작되도록 하는 바, 봉급수준의 단계적 평준화가 그 목표이다.

통일조약 체결 이후 발효된 봉급 경과 규정을 통해 봉급은 구연방주 봉급 수준에 대비, 1991년 7월 1일부터 60%, 1992년 5월 1일부터 70%, 1992년 12월 1일부터 74%, 1993년 7월 1일부터 80%로 각각 인상조정되었다.

동독에는 공무원(Beamte)이 없었기 때문에 1992년 1월 1일에 연방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공무원 원호법이 도입되어 복잡한 경과규정의 도입을 피하도록 하였다. 원호대책 청구권 신청에 필요한 대기기간은 5년을 원칙적으로 1990년 10월 3일부터 산정하기로 하며,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에 의해 연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다.

3.2. 공무원 신분에 관한 근거

1991년 초부터 신연방주의 공무원 임용권자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 행정 분야에 걸쳐 대대적으로 공무원 임용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주의 공무원 신분 취득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적성, 자격, 전문성의 판단기준에 따른 개별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공무원 임용시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개인적성문제가 신중히 검토된다. 가입지역의 공공행정 근무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문능력 이외에 특히 기본법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해 하시를 막론하고 헌신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기본법 제33조 제5항 및 연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 기능직 신분으로 임용된 경우

에도 원칙상 이와 동일하게 헌법에 충성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구동독 국가보위부를 위해 공식·비공식 활동을 했을 경우, 개인적성문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독시절의 과거 신분을 충분히 참작하여 개별심사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해고의 중요 근거로는 피임용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거나, 과거에 동독국가보위부를 위해 활동하여 공직신분 유지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한다.

이 점에 관한 한 연방내무부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가능한 한, 일원화된 실무행정이 이룩되도록 절차상의 지시를 내렸다. 오로지 인간다운 품행이 확고한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공공행정의 초당성과 법치국가성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개별심사를 통해 이미 신연방주에서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었다 (부록의 도표 Nr. 44 '1992년 1월 1일 및 1993년 1월 1일 현재 신연방주 공무원 임용현황' 참조).

4. 공직근무자의 법적 지위

4.1. 기존 근로조건의 지속 및 종료

동독의 서독 가입과 동시에 공직근무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동독의 임용권은 소멸되었다. 행정의 지속성은 물론, 피고용인을 위해 통일조약은 구동독 공직근무자들의 법적 지위가 기존 고용관계와 함께 원칙적으로 당분간 계속 유효하도록 해 놓았다.

그 결과 통일조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행정기관이 존속되거나 여타 기관에 귀속된 경우 고용관계가 존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업무양도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기본법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내지

주정부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기관의 존속문제가 아직 검토 중일 경우, 이 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고용관계는 연방 정부 내지 적정한 주체로 이양되어 존속되었다.

동독의 가입시점까지 고용관계의 이양이 궁극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면한 행정기관에 근무하던 피고용인의 고용관계는 정지, 즉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무효화되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급여 대신 최근 6개월 간 월 평균 근로소득의 70%에 상당하는 휴직금(Wartegeld)을 매월 받았다. 고용관계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피고용인이 재임용 내지 경우에 따라 다른 행정분야로 재임용되도록 하였다. 만일 재임용이 불가능했을 때에는 50세 미만일 경우 6개월, 만 50세 이상일 경우 9개월 이후 자동적으로 고용관계가 끝났다. 소위 이와같은 휴직 규정은 이미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에 삽입된 인력 감축의 의무사항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인력감축의 의무사항과 함께 과도기간 중 피고용인에 대한 별도의 사회복지 대책이 보장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1991년 4월 24일자 판시(1 BvR 1341/90)를 통해 휴직 규정을 적법하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임산부, 중장애자, 고령자와 같은 특수 집단에 대해서는 휴직 규정의 적용을 제한시켰다.

추가적으로 통일조약은 인력이 과다하게 영입된 기관의 경우 불가피한 감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해고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용인의 전문성 결핍, 인적 적성 결핍, 또는 인력 수요의 부족을 사유로 정상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당면한 피고용인에 대한 특별 사회복지조치를 통해 휴직금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상응하는 과도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특수규정으로서의 성격상 이와같은 규정의 적용기간은 한시적이다.

통일조약에는 비정상적 해고에 관한 무기한 유효 규정을 통해 과거 전력이 있는 인력의 격리를 용이하도록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정치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필요성이 참작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 역시 언

제나 신중한 개별심사가 따르도록 구체화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정상적 해고의 근거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원칙 또는 법치국가성을 위배했을 때 또는 과거에 국가보위부를 위해 활동했는 때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과연 고용관계의 존속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인 정황을 근거로 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4.2. 고용조건의 평준화

변함없이 가장 긴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신연방주의 공직근무 고용조건을 기타 연방지역에 적용되는 제 규정에 단계적으로 평준화시키는 일이다. 이미 이 방면에는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당분간 계속 적용되던 과거의 제 규정 중 대부분은 이미 1991년 1월 1일을 기해 구동독지역 연방 사무직 임금협약 및 이에 준하는 노무직 임금협약으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구동독지역을 망라하는 협약임금지역에서도 행정구축에 필요한 능력별 급료지급제도와 임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었다.

동부 협약임금지역(Tarifgebiet Ost)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료(Vergütungen)와 임금(Löhne)은 임금협약을 통해 1991년 7월 1일부터 우선 서부 협약임금지역(Tarifgebiet West)의 해당 금액의 60%로 책정되었다.

1992년 6월, 임금협약 체결당사자들은 동부 협약임금지역의 급료와 임금을 서부 협약임금지역의 해당 금액에 대비하여 1992년 5월 1일부터 70%, 1992년 12월 1일부터 74%, 1993년 7월 1일부터 80%씩 인상시킨다는 단계적 인상계획에 합의하였다. 이와같은 임금규정(Lohnregelung)과 봉급규정(Gehaltsregelung)은 그 최단 시행기간이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급료와 임금의 평준화를 위한 다음 단계는 오로지 구동독지역의 경제발전과 재정상태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3. 특별원호제도

동독에는 인민군, 인민경찰, 세관, 국가보위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위해 각종 특별원호제도가 있었다. 통일조약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취득한 청구권과 승계권을 법정연금보험제도에 이양하도록 하여 급부수령자와 승계권자가 동독의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사람들과 아무런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놓았다. 이미 사전에 성과를 거둔 전액지불액의 제한 및 특별원호제도의 폐지 이후, 1991년 12월 31일을 기해 1991년 8월 1일 발효된 청구권 및 승계권 이양법 - AAÜG - (1991년 7월 25일자 연금이양법 제 3조)을 통해 이양관계가 처리되었다.

법정연금제도에의 이양은 1992년 1월 1일부터 기존 청구권과 승계권 대신 원칙적으로 근속기간과 수령액에 기준하는 연금제도로 대체되는 성과를 발생시켰다. 국가보위부 특별원호제도에 가입된 기간과 고위직의 기타 특별원호제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금산정액을 특별히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VII.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1. 서문

이미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체결 이전에 동독에게는 자유·민주·연방주의·법치국가의 기본원칙과 유럽공동체의 사회질서와 법률질서에 부합하도록 동독의 법률을 새롭게 구체화할 의무가 부여되었었다. 이는 새로 형성된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기관을 신설하기 위한 선결요건이었다. 과거의 기관장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구동독 공산당과 너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건사업에 부적합하였다.

이와 별도로 대량의 노하우(Know-how)의 이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 동독지역의 주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도 인력초과상태가 여전하지만 - 연방정부와 서독지역주의 행정지원이 필요했으며 지금도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지원은 통일조약에 원칙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 결과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행정의 인력구조가 실제수요에 적합하도록 더욱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2. 행정지원 기구

연방과 주는 행정지원을 위해 각종 방안을 활용하였다.

2.1. 연방 - 주 조직정비처

연방내무부에 설치된 조직정비처는 기존 행정기관의 재편을 지원했다. 우선 기본법의 관할권 규정에 의거하여 동독의 중앙정부기관(약 1,000개)을 연방과 주에 부속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지난날 주의 차원을 초월하는 업무 또는 공공행정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은 폐쇄하고 신연방주를 위한 공동기구를 구축해야 했다.

연방과 주는 초기에 신연방주 전권대표에게, 그 이후 주정부 행정기관에게 자문관을 파견하여 새로운 행정구축을 지원하였다. 주정부의 고위기관과 산하기관의 조직과 구축을 위한 건의사항이 작성되었다. 구서독 행정기관의 적절한 인력을 알선하고 교육훈련과 연수교육을 지원하는 등 집중적인 인력지원이 뒤 따랐다.

2.2.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력 알선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이전의 대부분은 인력파견을 맡은 구서독지역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재원은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해 조달되었다. 인력알선을 위한 특별기구로 1991년 연방내무부와 지

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가 베를린에 합동 인력소개소 (Personalbörse)를 설립하였다. 합동 인력소개소는 신연방주의 인력수요와 구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2.3. 신연방주 재건단(Arbeitsstab Neue Länder)

연방내무부는 1991년 봄부터 1992년 말까지 본과 베를린에 신연방주 전담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연방주 재건단’을 운용하였다. 신연방주 재건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문제를 비롯하여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자문하였고, 인력 알선을 지원했으며, 각 부처와 합의 하에 ‘구동독지역 부흥 공동대응책’에 의한 사업을 지원했다.

신연방주 재건단은 주 정부기관과 지방자치행정의 업무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1992년 말 해체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연방내무부는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축을 재정지원, 정보제공, 자문, 실무지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2.4.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1990년과 1991년, 연방내무장관 주도하에 다수의 연방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신연방주와 베를린에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군수와 시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과제에 익숙하도록 하고, ‘구동독지역 부흥 공동대응책’을 포함한 연방정부 계획에 의한 지원가능성에 관해 보고하며,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와 신탁청과 기타 유관기관 사이의 의견교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2.5.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위한 정보 안내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보안내책자를 통해 통독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중요 법률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한 처리권고사항이 시, 군, 동에 전달되었다.

3.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지원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은 헌법 규정에 따라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3대 차원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3년 6월 1일 현재 구서독지역 출신 총 16,602 명의 직원을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도록 파견(Abordnung) 또는 전보(Versetzung)시켰는 바, 이 중 15,015명은 연방행정기관에, 1,587명은 주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독지역 주 행정기관에서는 총 8,337명의 직원을 동독지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중 구서베를린 출신 1,614명이 구동베를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독지역주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10,000명 이상이 신연방주 지방자치 행정기관으로 왔다.

연방정부는 행정 및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지원에 있어서 신연방주에서의 근무활동이 자율적 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표방했다. 따라서 능률적인 법치국가에 걸맞는 구동독지역 행정기관과 법원의 구조를 구축함에 있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서독출신 공직자에 대한 특수한 요구사항은 원하는 이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과 개인적인 근무의욕을 전제로 한다.

업무능력은 오로지 적절한 개인적 참여의식이 있을 때에만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보고서를 통해 실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요구사항은 임용권자 내지 고용주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복지제공의 의무를 수행할 것도 전제한다.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는 구서독지역 출신 공무원, 판사, 군인, 근로자, 연금생활자로서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으로 구동독지역 근무처로 전근할 경

우 재정적·개인적 부담을 조정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근무의욕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하여 방대한 공직법상의 조치를 취했다. 연방정부의 각종 조치가 연방내무부 발간 설명서에 요약되어 있다 (부록 Nr. 45 '신연방주 행정을 위한 인력지원의 일환으로서 연방공직자의 파견' 참조).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행정지원을 보완하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지자체간의 자매관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조치로서 연방과 주의 차원에 걸친 추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마련해 놓았다.

그 중 연방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의 각종 프로젝트가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예컨대 연방내무부가 재정지원하는 '신연방주 지방자치행정 구축지원' 프로젝트는 '자조(自助)를 위한 지원'이라는 모토하에 정보제공, 자문, 연수교육 등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총 17가지 업무협조를 공개한 바 있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약 200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 풀 (Expertenpool)에서 보낸 자문역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건축예산, 군(Kreis)의 재편 등에 관한 집중적 자문 활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 협회, 기관 등은 교육훈련과 연수교육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자문받고 세미나와 각종 행사에 관한 정보 안내를 받았다. 독일 도시학 연구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정보안내서비스를 통해 시, 군, 동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정보안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방 여성·청소년부와 연방 교육·학술부는 청소년 지원분야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분야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직업수행에 필요한 자질 향상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정기적인 정보안내, 구체

적 연수교육테마를 보완하는 상담제공, 구서독지역 지방자치단체 내의 임시 파견근무를 위한 일자리의 알선 등이다.

4. 행정인력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연방공직자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신연방주로 전보되었거나 신규채용된 과거의 연방공직자를 위해 주정부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상이한 봉급수준과 추가수당의 지급때문에 인상된 비용을 보전해 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 중 총 4,000만 DM을 사용하였다. 1993년도 연방예산에 5,000만 DM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1990년 말부터 연방내무부는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효과는 매우 크다. 즉 1992년 중 구서독지역으로부터 2,100명에 달하는 유능한 직원들이 인건비 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신연방주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다.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 중 신연방주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용으로 총 1억 8,000만 DM을 지출하였다. 1993년도 연방예산에는 2억 DM이 책정되어 있다.

5. 특수행정 구축

5.1.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파악 및 정리, 그리고 상급재정관리국 또는 신탁청에 재산귀속을 신청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은 특수한

법률지식을 위해 교육훈련과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방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산' 실무단은 이러한 인력을 위해 개별지도 및 단체지도를 통해 교육, 자문, 후견하고 있다.

이미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산분야 담당공무원들은 연방공공행정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2일간의 전문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13가지 교육행사에 2,0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1993년 중 계획되었거나 이미 진행된 전문 세미나는 14가지였다. 연방 국토계획·건설·도시건설부는 6대 모델안과 더불어 대규모 신축주택단지의 재산귀속 준비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귀속계획을 근거로 한 재산귀속을 통해 재산의 귀속과 새로운 부동산의 형성이 연계되도록 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한다.

5.2. 재산관리청의 설립

연방내무부의 주관 하에 설립된 각 부 합동 실무단은 미해결 재산 처리를 위한 업무 및 긴급한 인력확보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관청의 인력은 1992년 4월 현재 2,350명이었으나 현재 약 2배 증가한 4,100명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 출신 직원의 투입을 위한 인건비 보조금 지분이 증가되었다. 변호사 증원계획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미해결 재산관리청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1993년 3월 31일 현재).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되도록 되어 있으며 매 관리청마다 1명 내지 2명의 변호사가 배치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신연방주 출신 직원 500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 확보되어 있다.

인력보강조치는 재산관리청의 직원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을 통해 보완되는 바, 이와같은 연수교육은 연방 재정아카데미의 협조 하에

연방 미해결재산관리청을 비롯하여 연방행정청에 의해 수행된다. 나아가 재산관리청은 각종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데, 그와같은 것으로는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법에 입각한 신청서 처리를 위한 우선순위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5.3. 측량 및 등기제도

구서독주 측량행정기관은 기존 각 주간 자매결연관계의 일환으로 구동독 지역의 측량 및 등기행정기관의 구축을 적극 지원하였는 바, 그와같은 지원으로는 전문인력의 파견, 교육훈련 및 재연수교육, 자매주에서의 임시파견 근무, 기자재와 차량의 제공, 측량 및 등기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측에서는 연방내무부가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통해 행정전문인력의 임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인력은 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 측량관계기관에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파견되었다.

1993년 연방국방부는 측지학 전공 장교를 비롯하여 일반병을 행정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으로서 연방군의 기자재와 차량과 함께 수개월간 신연방주에 파견하였다.

5.4. 환경보호행정

동독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거의 무시되었다. 따라서 우수한 경제기능이 긴급하게 구축되기 위하여서는 구서독의 표준상태가 주도면밀하게 이양되어야 했다. 그래서 구연방주에게는 신연방주 해당 특정지역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환경타당성을 검토할 때 지원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그 최우선 사안이 제출된 허가신청서에 대해 구서독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서를 받는 것이었다.

나아가 신연방주 행정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그곳 직원들을 교육훈련시켰다.

행정지원의 의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 이유는 화학공단과 대단위 연소시설과 같은 생산시설의 신설과 정비 및 대대적 설비보강을 위한 허가 신청건수가 가까운 장래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 교육훈련 및 연수에 대한 지원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국가권력의 일원화’, ‘노동자계급을 위한 당의 지도적 역할’이라는 원칙 하에 교육훈련을 받은 후 활동했던 동독공직자들은 1990년 10월 3일부터 민주주의 법치국가 행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구서독 법률에 알맞도록 변화되어야 했다. 동독의 기존교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동독공직자의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연방정부는 동독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인력은 물론 가입지역에서 신규채용한 공직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조치를 취해야 했다. 총 280,000명의 연방공직자들이 연수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 연방체신부 단독으로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187,000명에 달했다.

새로 형성된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새로운 법률제도를 습득해야 했다. 각 주는 아직 구성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구서독주가 교육훈련 및 연수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총 5,000명)에 대한 자체 교육에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 및 재연수대책을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였다. 1991년과 1992년 중 총 4,200억 DM이 약 67,000명의 공직자 교육을 위해 지출되었으며 1993년 역시 이와 비슷한 금액이 책정되었다.

구서독주를 통한 지원 역시 이와 비슷한 상태이다. 그와같은 지원은 자문

계획의 수행 및 자원조달, 신연방주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50,000명에 대한 교육, 실습훈련 등이다.

연수교육지원은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교육훈련 및 연수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파견, 연수생의 파견근무, 조직지원 등이었다.

199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대표 연방연합회는 약 100,000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교육시켰다. '자매 지방자치행정 자문'이라는 방안에 따라 약 850명의 구서독출신 자문역들이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에서 17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991년부터 신연방주는 자체 교육훈련 및 재연수시설 구축에 착수하였다. 모든 주에 전문대학, 행정학교, 연구소, 행정·경제 아카데미 등이 설립되었다.

VIII. 국내 치안

1. 통일이전의 상황

동독의 치안기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관에 따라 중앙집권화 되어 있었고 사회주의적 사회의 구축과 보호에 기여하였다. 경찰권 수행기관은 독일 인민경찰이었으며 그 관할영역은 대단히 컸다. 인민경찰에는 보안경찰, 교통경찰, 형사경찰, 여권 및 주민등록 업무, 수송경찰, 형사소추 업무, 소방대, 공급부대, 전투단, 인민경찰 기동대가 소속되어 있었다. 인민경찰은 내무부의 지휘통제를 받았다. 그에 비해 군사적 장비와 조직을 갖춘 '인민경찰 기동대'는 병영에서 근무하던 수송경찰과 '노동자 계급 전투단'과 함께 1970년부터 국토방위를 위한 군의 일부를 구성하였고, 주로 병역의무가 있는 징집해당자에 의해 충원되었다.

동독의 국경수비 임무는 군사적 편제로 운용된 국방부 산하 국경수비대(Grenztruppen)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독이라는 불법 체제의 주된 억압장치로서 가장 드러난 기관은 국가보위부(MfS)였다.

과거 국가보위부는 국내 사찰임무와 대외 정보임무와 함께 '무장된 조직'으로서 '당의 방패이자 창검'이었다. 국가보위부의 정식요원은 최소한 8만 5천명에서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소위 비공식 요원(IM)의 수는 1990년 초 원탁회의에서 10만 9천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실제로 이의 몇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각종 세부사안에 걸쳐 완전무결한 치안지상주의 및 억압장치가 개발되어 시민들이 이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2. 통일조약에 따른 기구의 재편

기본법의 권한 규정과 통일조약의 제시 조건(제13조)에 따라 독일 통일의 날을 기해 특히 인민경찰의 근무조직과 같은 동독의 국내치안 행정기관은 신연방주의 관할권으로 이양되었다.

다만 기본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의해 임무가 수행되어야 할 기관은 연방정부에 편입되었다. 이와같은 기관은 특히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된 동독정부가 새로 구축한 국경수비기관이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그 관할 내에서 인수한 기관을 이양 또는 폐쇄하였다.

3. 신연방주 경찰의 구축 및 연방정부의 지원

1990년 6월 29일자 내무장관 회의는 앞으로 형성될 동독지역의 주를 위해 국내치안분야와 법치국가적 국가구조 및 행정구조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그 핵심사안은 새로 형성될 연방주에 대한 구서독지역의 자매주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멸망과 더불어 붕괴된 중앙집권식 치안조직은 시민에게 친근하면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연방주의 구조에 의한 현대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경찰조직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이와 동시에 소방대, 여권 및 주민등록 업무, 수송경찰 등 경찰과 무관한 분야는 분리시켜야 했다.

신연방주 경찰법은 발효되어 모든 신연방주에 경찰조직이 새로 형성되었다.

신설된 조직구조에는 기존 인력이 배치되었으나 고위직이 그만 둔 자리는 새로 충원되었다. 구동독 인민경찰 소속 인력으로서 인수된 후 재임용여부는 적성, 능력, 전문성에 따라 결정되었다. 경찰에 남아 계속 근무하게 된 모든 공직자는 개별심사를 받았다. 이러한 절차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1991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있다.

주민수에 대한 경찰수의 비율, 즉 경찰의 비율은 신연방주가 서독주와 비교할 때 그리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인력의 일부가 아직도 교육훈련 및 재연수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자 수는 아직 완전 충원되지 못한 상태이다.

연방정부는 구서독주와 함께 구서독지역을 모델로 하여 기동경찰의 조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그 이유는 앞으로 각 주의 기동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가 경찰이 처리해야 할 중대상황 및 분쟁상황에 대처하여 연방전역에 걸친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이다 (예: 대규모 시위, 대형 행사, 성토 대회). 이를 위해 Sachsen 주에는 2개의 기동경찰국, 기타 신연방주에는 각각 1개의 기동경찰국이 신설되었다.

1991년부터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와 체결한 행정협정에 따라 신연방주 기동경찰에게 지휘 및 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였다. 단위부대의 편성과

장비구축은 1996년 말까지 거의 완료될 것이다. 이 시점까지 연방정부는 약 1억 1,000만 DM을 투자할 것이다.

우수한 경찰이 필요로 하는 인력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찰조직의 고위직은 우선 구서독주의 인력으로 충원되었다. 또한 교육 훈련용 일자리의 마련과 각종 연수과정의 시행을 통하여 막대한 전문지원이 뒤따랐다.

연방형사경찰청(Bundeskriminalamt)은 주(州)합동 형사경찰청의 구축, 그리고 합동 형사경찰청이 해체된 이후 신설된 주형사경찰청의 구축을 위해 인력과 조직면에서 막대한 지원을 했다. 지금까지 구축업무에 동참하기 위하여 약 100명의 연방형사경찰청 공무원이 신연방주로 갔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신연방주 경찰이 구서독지역 수준에 도달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4. 신연방주에의 연방국경수비대 창설 및 편입

동·서독 통일 직전 드메지어 정부는 구서독의 모델에 따라 국경수비조직의 편성에 착수하였다. 약 8,6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신설 국경수비대는 동독 내무부에 의해 주로 구 국경수비대원, 수송경찰과 소위 여권검사부대를 포함한 경찰 인력, 세관행정기관 근무자로부터 신규 채용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이 조직은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국경수비대(BGS)의 일부로서 연방국경수비대 東部支隊 (BGS-Ost)가 되었다.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는 초기부터 국경수비임무 이외에 통일조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철도경찰 임무, 항공교통 안전 대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베를린에 대한 연합국의 유보권이 폐기됨과 동시에 연방국경수비대는 서베를린내 공항의 통제 및 국경통과 교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동독 국경수비대의 실제 인력 (약 7,000명)은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국경수비대로 편입되었다. 그 이후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가 필요로 했던 건설화의 역점은 무엇보다도 인수인력의 재심을 비롯하여 직원의 교육훈련 및 재연수교육이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원칙 또는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질렀거나 과거에 국가보위부를 위해 활동하였기 때문에 고용계약의 지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은 방대한 교육훈련 및 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이론과 전문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기존 연방지역 경찰공무원이 갖추고 있는 법치국가적 교육수준과 지식수준에 접근하게 되었다. 직원들의 대부분은 그때 그때마다 연방공무원의 신분으로 영입되었다.

이미 초기부터 있었던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의 결원상태 (약 1,600명)는 개인심사결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원상태는 신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신규채용 (1991년 약 1,200명; 1992년 약 1,400명)하거나 연방국경수비대 서부지대 출신 경찰관의 파견 또는 전보를 통해 이미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아직도 미결상태인 결원은 신규채용자를 늘려 해결할 것이다.

인력안정대책에 병행하여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연방국경수비대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자재를 새로 구입하여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의 장비가 매우 개선되었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 구축을 위해 매년 2억 6,000만 DM이 예산에 책정되었으며, 그 핵심지출분야는 약 2억 DM에 달하는 인사분야이다.

1992년 1월 23일자 업무이양법과 함께 연방국경수비대가 구서독지역 철도경찰임무와 항공치안임무 역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연방국경수비대의 조

직은 1992년 4월 1일부터 재편되었다.

연방국경수비대 중급기관으로서 연방국경수비임무 일체를 관장하는 5대 지역 국경수비대가 설립되었다. 동부 국경수비대 (베를린 소재)는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오더, 피르나 국경수비대와 베를린 철도경찰청, 그리고 4대 기동국과 함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주에 대한 법률이 정한 임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메클렌부르크 포폼먼 주는 북부 국경수비대, 튀링엔과 작센 안할트 주는 중부 국경수비대의 관할영역에 각각 속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경수비대의 지역적 관할영역이 의식적으로 과거의 내독국경을 초월하여 확정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록의 도표 Nr. 46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의 직제’ 및 Nr. 47 ‘연방내무부 경찰국 기구표’ 참조).

인력의 혼합구성, 합동 기동투입 및 교육훈련, 관할영역의 재편 등을 통해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대가 연방국경수비대에 더욱 긴밀히 통합되고 있다.

5. 州헌법보호청의 설립 (연방 헌법보호청법

제2조 2항에 근거)

신연방주 헌법보호청은 법적, 조직적, 인력적으로 신설이 불가피했던 바, 기본법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구로서 그 법적 임무가 명시되어 있는 구서독주 헌법보호청의 구조를 기준으로 구축되고 있다.

헌법보호청은 연방주의 제도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다. 하나의 연방헌법보호청과 16개의 독자적인 주(州)헌법보호청이 있는데 주헌법보호청은 의회 및 기타 감독기관으로부터 상이하고 초당적인 감독을 받는다. 헌법보호청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경찰로서의 집행권이 없으며 산하에 경찰조직을 둘 수 없다 (이른 바 기관의 분리원칙). 그 임무는

극우 및 극좌 성향, 폭력사용 또는 이를 목표로 한 준비행위를 통해 독일의 대외적 이익에 위해를 초래하려는 시도, 외국에 대한 안보 내지 첩보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모든 신연방주는 시의적절하게 주헌법보호청을 설립하였다. 주헌법보호청의 모든 직원은 임용전에 심사를 받은 후 신규채용되었다. 국가보위부 출신 직원은 임용되지 않았다. 연방헌법보호청과 자매주 헌법보호청은 신연방주 헌법보호청의 설립을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했다.

6. 민방위 및 재난보호체계의 구축

지난 날의 동·서대결이 사라진 후 안보정책의 전반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민방위 임무 역시 새롭게 정의되었다.

90년대 중반까지 신연방주 민방위체제와 재난보호체제는 약 27,0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될 960개 전문봉사단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47개의 지역 연합체가 설립되었다. 신연방주 출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은 작센 안할트 주립 중앙 소방재난방학교(Magdeburg 부근 Heyrothsberge 소재)에서 실시되고 있다. 재난보호 및 항공조난구조를 위해 신연방주는 각각 민방위용 헬리콥터 1대를 운용하고 있다. 신연방주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사능의 감시·감독을 위해 방사능 측정 조기경보망에 연결되었다. 연방 자력방호단은 1993년 말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자력방호 교육훈련에 착수할 것이다.

IX. 정치 교육

동독에서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교육'이 핵심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 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확신하고 '노동자계급을 영도하는 당'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사회주의적 인격'을 형성함이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교육은 동독 공산당의 통치수단이었으며, 동독인들에게는 평생동안 계속되는 체험이었다. 그것은 구동독 공산당, 대중조직, 대중매체를 통한 교조주의화의 대상이었다. 그와 동시에 직업수행과정의 일부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고위직 진출은 비록 그 급수는 상이하더라도 이데올로기적 신념과 적극성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특수 교육내용(국가시민학, 군사학) 임과 동시에 대중조직 활동('에언스트 텔만' 선봉조직, 자유독일청소년단, 체육·기술회)의 핵심사안으로서 일반화된 교육원칙을 통해 정신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구동독의 공산당 통치가 붕괴된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기이니셔티브에 입각한 다원주의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새로 얻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질서에 정신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과제였다.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위시하여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자율단체와 정당 산하 재단이 막대한 인력과 재원을 동원하여 적극 참여하면서 이 과제를 맡았다. 특히 동서독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 상호간의 불신과 선입견을 없애도록 하는 세미나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교사연수 분야에서도 활동했으며 5대 신연방주 문화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새로운 교과과정을 작성하였다. 새로운 교육내용을 통해 동독의 멸망 이후 '국가시민학'이 없어진 공백이 가급적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메꾸어지도록 하였다.

정치교육활동은 신연방주에 주정치교육본부가 구축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주정치교육본부는 초당적 기관으로서 출판물과 교육행사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주정치교육본부는 거의 모든 신연방주에 걸쳐 설립되었는데 재정적, 인적 상태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를 통해 행정지원을 하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면서 주정치교육본부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X. 통계 행정 체계의 구축

동독의 통계체계는 오로지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의 조종과 감시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변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시장경제적 요구조건에 알맞게 적응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미 1990년 3월 말, 연방통계청 베를린 지청 내에 독일 통계실무단이 구성되어 연방통계 행정체계에 필적하는 통계행정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시장, 가격, 생산, 매출, 대외무역, 소매상 등의 분야에 걸친 평준화가 착수되었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연방 통계 관련 법규 역시 동독지역에 적용됨에 따라 이 시점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었던 통계행정체계는 연방주의식으로 분류된 연방통계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과도기간 동안 동독통계청은 5대 신연방주를 위한 공동통계청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신연방주의 주통계청은 구서독주 주통계청과 연방통계청의 지원을 통해 지체없이 구축될 수 있었기에 공동통계청은 1991년 12월 31일 조기 해체되었다.

동독 시점까지 동독 통계행정의 보고체계는 연방통계행정 보고체계와 달랐기 때문에 가입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통계조사를 완전히 수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91년 3월 26일자 통계평준화 규정 (Statistik-anpassungsverordnung)을 통해 각종 통계조사활동이 잠정적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조사기간이 연기되었다. 신연방주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분야와 마이크로 센서스 분야에 걸쳐 노동시장과 관계되는 특징을 파악하

기 위한 조사활동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제조업과 대외무역과 같은 중요분야에 있어서는 연방통계행정에 알맞는 방법이 조기에 달성되었다. 현재 연방통계행정의 거의 모든 업무분야에 걸쳐, 특히 경제·사회분야의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필요한, 정확한 최신 정보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연방통계청은 동독 통계청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일별한 후, 연방통계청의 결과치와 거의 비교될만한 통계자료를 선별 정리해 놓았다.

제 4 장 형법, 구동독 불법문제의 청산

I. 통일의 형법적 측면

형사법 분야에 있어서의 법 통합은 1990년의 정치상황의 발전에 발맞추어 크게 2 단계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먼저 1990년 초 당시 구동독 형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舊동독 형법

1968년 7월 1일 새 개정 형법전이 발효되기 전까지 舊동독에서는 1871년에 발효된 독일 제국 형법이 유효했었다. 반면 서독에서는 이미 오래전 신 형법전이 발효되고 있었으나 중요한 규정들의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역시 이 제국 형법전의 영향하에 있었다. 때문에 1968년의 舊구독의 형법전 개정은 이념과 내용에 있어서 서독 형법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몇번의 형법 개정과 보충 작업을 거친후 舊동독은 1987년 12월 18일의 제 4차 형법 개정법률에서 실무에서는 이미 관행화 되어있었던 사형 제도의 폐지를 확정지었다. (치형에 대한 보고서, 부록 Nr. 48 참조).

舊동독의 형법은 사회주의적 국가,사회질서 확립과 계획경제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때문에 이 형법전에는 자유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규정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형법의 임무는 범죄인을 개선, 교화하여 사회주의적 법치질서를 준수하도록 만드는데 있었다.

형법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原狀回復의 原則(Das Prinzip der Wiedergutmachung)이었다. 즉 SED 정권 (舊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치하의 정치체제)과 그 집권자들에 대한 범죄인의 정치적, 윤리적 자세를 개

선, 교화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형법은 사회주의적 국가,사회질서를 수호하며, 他생산활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 계급의 힘을 실현하고, 舊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강령에 포함된 “발전된 사회주의적 사회”(Die entwickelte sozialistische Gesellschaft)의 조속한 실현에 기여함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법원의 판결은 권력분립의 의미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통제하에 있었다.(비교. 법원의 임무. 부록 Nr. 49 참조). 舊동독 입법자들은 형벌을 새로운 사회질서와 이해관계를 수호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은 범죄인의 사회주의 사회로의 재 편입을 돕는,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반동혁명적인 범죄들을 진압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2. 제반 법적 상황의 발전

2.1 통일이전의 상황

위에 언급한 舊동독 형법의 반법치국가적 구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脫이데올로기화, 脫정치화, 그리고 서구의 법치국가적 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의 규정들을 삭제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兩獨間의 화폐, 경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 계획의 추진을 가로막는 형법상의 규정들이 삭제되어야 했다.

兩獨 위원단의 몇차례의 협상끝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마련되어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에 명시되었다.

兩獨간에 협상되어 위 조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형사법 개정은 舊동독의 제 6차 형법개정법률안 (형법, 형사소송법, 질서위반법, 형등록법, 여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에서 이루어졌다. 1990년 7월 1일 발효된 이 법은 위 조약에 명시된 법개정뿐 아니라 舊동독 자체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많은 개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同법은 舊동독 정치형법의 본질적인 변화를 피하였다. 즉 과거 동독에서 안보이념의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들이나 행정억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同법은 위의 양독간의 국가조약에 의해 동독측에 부과된 입법상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었다. 즉 법체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식, 예를들면 재산범죄와 소유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사회주의 소유권에 대한 범죄행위와 사적 소유권에 대한 범죄행위로 구별하여 각각 다른 장에 규정한 것등을 제거 하는것 이었다. 또한 형사 소송절차내에서 범죄인의 개인적, 사회적 결함을 사법기관과의 연대하에 사회일반의 도움, 특히 범죄인의 사회주의적 총체적 환경의 도움을 빌어 제거하는 것을 입법 목적상 가능케하는 형법 총칙상의 모든 규정들이 삭제 되었다. 이상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990년 6월 29일의 제 6차 형법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정채되어 있었던 舊동독의 형법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조약의 발효와 함께 이 법은 사실상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2.2 통일조약 (Einigungsvertrag)

1990년 7월 1일의 화폐, 경제, 사회통합 이후 원칙적 의미에서의 법통합이 달성되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양독 지역간의 협상에서는 특히 서독측의 모든 연방 형사법이 동독지역, 즉 새로운 州들에게도 확장, 적용되어 질지의 여부가 집중 논의되었다.

통일조약 제 8조에 의하면 이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서독의 연방법이 동독 지역의 新州들에게도 확장 적용되어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다만 연방법의 적용범위가 특정주나 연방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인 방향제시에 불과하고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야 했다. 즉 서독 연방법의 어떠한 규정들이 동독지역의 新州들에게도 바로 적용될수 있는 것인지, 또한 예전 舊동독의 형사법률들 중에서 어떠한 규정들이 범죄에 대한 형법상 대응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당분간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

가 해결되어져야만 했다. 때문에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舊동독 법률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 졌다. 물론 이번에는 법의 脫이데올로기화, 脫정치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이론상 그리고 법실제상의 여러 관점들이 고려 되어졌다. 이 심사에서 집중 검토된 규정들을 예로 들자면 낙태에 관한 규정, 보안감호처분(Sicherungsverwahrung)에 관한 규정, 그리고 형등록법(Strafregisterrecht)상의 규정과 소년형법(Jugendstrafrecht)상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

양독 지역간의 협상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표는 물론 완전한 법의 통합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그동안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온 사회인식의 차이 또는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의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규정들을 선별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협상단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였다. 서독측에서의 일반적인 여론도 서독의 모든 형사법 규정들을 예외없이 일괄하여 동독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낙태죄와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단순한 확장 적용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았다. 또한 서독 형법 제 144조 (해외 이민 사기)와 제 236조 (피 유괴자의 동의에 의한 유괴) 규정도 현 시대 실정에 맞지 않고 형사처벌 통계에서도 거의 사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협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서독 형법전의 대부분의 규정이 동독지역의 新州들에게도 확장 적용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1990년 10월 3일 부터 몇개 규정의 예외를 빼놓고는 서독의 형법전이 동독지역에도 발효되고 있다. 서독형법의 일부 규정이 동독 지역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개개의 사례에 대해 서로 상이한 규정이 존재하게 되고 - 전 연방 독일에 효력을 갖는 서독의 법규정과 일부 사례에 대해 아직 효력이 인정되는 기존 동독의 법규정 - 이로인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準據法)의 충돌이 생기는 경우는 지역간 형법의 원칙 (Grundsatz des Interlokalen Strafrechts)에 따라 규율된다. 그리고 형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그외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형법전 도입법 (Einführungsgesetz)에 경과규정이 마련되었다.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즉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행하여지고 그 이후에 심판을 받는 사건에 있어서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중 어느법이 경한 법으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 2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양독지역에 서로 상이한 법 규정들이 존재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협상단은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완전한 법통합을 이루어야겠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통일조약에서는 일정한 시효를 가진 경과규정을 들으로써 이로 인해 생길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였다.

2.3 통일이후의 제반 법적 상황의 발전

법통합에로의 길은 통일 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낙태죄의 가벌성 여부에 대한 법통합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兩獨지역의 법현실이 낙태죄의 형법적 규율을 놓고 각각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서 베를린을 포함한 서독 지역의 형법규정에 의하면 산모나 태아의 건강, 범죄로 인한 임신 또는 산모의 곤경상태와 관련된 의사의 지시 (독일 형법 제 218조, 소위 Indikationslösung)가 없는 경우 낙태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되는데 반하여, 동독지역에서는 1972년 3월 9일에 공포된 낙태에 관한 법에 따라 12주 내의 낙태는 의사의 지시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 되었다 (소위 Fristenlösung). 독일 연방정부(기민당, 기사당, 자민당)와 야당측(사회당, 녹색당등), 각 州정부와 동,서독 여러 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 토론을 거친후에 통일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일단은 동서독 지역에 기존의 상이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통일조약은 통일이후 독일의 입법자에게 1992년 12월 31

일 까지 종래의 경우보다 태아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고 임신부가 처한 갈등상황을 법적인 여러 장치 (상담제도와 사회 扶助등)들을 통해 보다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법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조약에 의해 부과된 과제가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가 하는 것은, 1992년 7월 25일 연방 하원에 낙태죄의 규율에 대한 7개의 서로 상이한 법안이 제출된 사실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7개의 법안에는, 일정한 기간안에는 낙태의 처벌을 무조건 배제하자는 모델로 부터 거기에 의사와의 사전 상담을 의무로 추가 하자는 모델, 그리고 지금까지의 규정보다 더 엄격한 형태의 의사의 지시를 규정한 모델등 여러 생각 가능한 모델들이 제시 되었다.

결국 연방하원은 오랜 토론끝에 여당측의 자민당과 야당측의 사회당, 녹색당등이 의견을 조정하여 제출한 소위 “그룹 제출안”(Gruppenantrag)을 통과시켰다. 여당측의 기민당과 기사당은 이 법안에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그룹 제출안의 정식 명칭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어린이 우호적인 사회의 촉진, 임신부에의 도움 제공, 그리고 낙태를 규율하기 위한 법” (임산부와 가정 扶助법, Schwangeren- und Familienhilfe-gesetz) 이다. 이 문제를 놓고 여당내, 심지어 한 정당내에서도 서로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회 모든 주요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여 격심한 여론 분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의 통과로 오래동안 지속되었던 낙태에 관한 논쟁은 일단 마무리 지어졌다.

妊産婦와 家庭 扶助法은 임신부에 대한 다양한 부조책, 의사와의 상담 기회, 그리고 21세 까지의 여성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피임수단에 대한 공공 의료 보험 기관의 경제적 원조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同법은 낙태에 관해, 임신부가 본인이 처한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하고 3일간의 숙고 기간을 가진후 12주 내의 기간안에 의사에 의해 낙태를 시키는 경우는 형법상 不可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92년 8월 4일 연방 법률공보에 공시되었다. 그러나 同법이 규정한 12주내 상담조건부 낙태허용안에 대하여 바이에른 州정부와 249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위헌심사 가처분 사건에서 연방헌법 재판소는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1992년 8월 5일로 예정 되었던 동 법률의 시행을 저지하였다.

1993년 5월 28일의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에 의해 명시된 낙태의 원칙적인 금지와 회태의 의무 (Pflicht zum Austragen des Kindes) 를 재확인, 강조했다. 그리고 또한 동 재판소는 임신부와 가족 扶助법에 규정된 낙태에 관한 형법적인 조항 일부를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12주내 상담 조건부 낙태허용을 헌법에 보장된 원칙적인 낙태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한 합헌적인 것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동 재판소는 적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낙태수술에 대해 공공 의료보험 기관이 경제적인 원조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 이러한 낙태 수술에 대해 임신부의 의료보험 기관에 대한 경제적인 보조 청구권을 부인하였다. 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임신부가 형이 면제되는 낙태, 즉 12주내 상담조건부 낙태를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인 도움(Sozialhilfe)을 제공하는 것이나 고용주 측에서 임금을 계속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동 재판소는 입법자로 하여금 특정한 경우 태아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의 재판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부와 가정 扶助법에 규정된 낙태에 관한 새로운 형법적 규정들중 헌법위반으로 인해 무효로 선언된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1993년 6월 16일 부터 전 독일에 발효, 시행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 35조에 따른 집행명령).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연령 상한선의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조약은 동서독 지역에 대한 통일된 형법적 규율을 제시하지 않고있다. 현행 형법 제

175조 (18세 미만인 남성에 대한 성행위 처벌 규정)와 제 182조 (16세 미만인 소녀의 성적행위로의 유혹에 대한 처벌규정)는 연방정부에 의해 1992년 12월 27일 통과되고 1993년 4월 23일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 토론에 부쳐진 형법개정법률안에 의해 개정될 예정이다. 특히 현행 175조는 성 중립적이고 통일적인 청소년 보호규정(Jugendschutzvorschrift)에 의해 대체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법률이 마련되면 청소년들을 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동서독 지역에 통일된 형법 규정이 발효될 것이다.

II. 舊동독 불법행위의 형법적 청산과 통일관련 범죄

과거 舊동독에서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들의 법적 처리문제를 놓고 독일은 지난 40년 동안의 국가 불법행위를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 문제들의 법적 처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서독의 형법체계가 주로 개인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규율하도록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舊동독측의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 적지않은 경우 여러층의 정부기관이 관련된 불법행위를 규율하기에는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통일조약 작성시에도 SED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청산시 생길수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역시 피할수가 없었다. 舊동독 정부에 의한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형법을 만들경우 이는 최고법인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그 이유는 기본법 제 103조 2항에 규정된 형법의 소급효(遡及效) 금지원칙에 따라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만이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통일조약은 형법전도입법(EGStGB) 제 315조 1항과 서독 형법 제 2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위당시 동독에서 유효하던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조약에 의해 전 독일에 확장, 적용되는 연방의 법이 개개의 사례에 있어서 예전 동독의 법보다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경

우에는 서독 형법 제 2조 3항에 따라 연방법이 행위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형법전 도입법 제 315조 4항의 규정에 의해, 연방의 법이 소위 특별한 법률적용의 원칙에 따라 이미 1990년 10월 3일 이전에도 동독 지역에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 적용될수 있는 경우에는 통일조약의 기초가 된 행위지 법 우선의 원칙과 상관없이 연방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를 들자면, 서독 형법 제 234a조에 규정된 독일인에 대한 납치, 제 241a조에 규정된 독일인에 대한 정치적 모략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국외에서 행하여 졌다 할지라도 서독 형법 제 5조 Nr.6의 규정에 따라 서독 형법이 행위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질 수 있다.

舊동독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적인은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는 구동독법의 허용규정들을 근거로 자기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같은 규정들은 모든 문화민족에 있어 공통적인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법적 확신을 무시하고 법의 불가침한 핵심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는 舊동독 법에서의 허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로 남는다.

연방대법원(BGH)은 경계선 총격사건에 대한 1992년 11월 3일의 판결에서 예전 나찌 정권에 의한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이러한 기본원칙들이 구동독에 의한 불법행위의 법적청산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한 국제인권협약들이 세계 범공동체의 확신에 비추어 어느 경우에 국가에 의한 인간 권리의 침해가 있었는가의 문제에 대해 판단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1992년 11월 3일 연방 대법원 판결. 부록 Nr. 50 참조).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동독 국경 수비대 병사들에 의한 총격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同법원은 비무장인체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피난민을, 불법 월경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舊동독 국경선법 제 27조 2항에 기초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저격하여 살해한 병사들의

행위는 정당화 될수 없는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40년 동안 SED 정권下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중 정치적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 과연 시효가 진행 내지는 경과 되었다고 보아야 할지의 문제가 생긴다.

일반적인 견해는 현행법의 해석상 이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즉 舊동독의 형법에 비추어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정치적인 이유 또는 법치국가 원칙에 反하는 이유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지난 40년의 SED 정권 기간동안 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舊동독의 법률에도 서독 형법 제 78b조에 해당하는 조항, 즉 법률상 訴追가 開始될 수 없거나 續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나찌시대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치지도자의 意思가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졌던 것처럼, 舊동독 정치체제下에서 행하여진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소추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실적인 방해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가나 당 지도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률상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나 당 지도부의 의사가 구동독의 사법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동독 최고 재판소의 방향들 (Die Orientierung des Obersten Gerichts der DDR)이라는 강령이 잘 증명해 준다.(구동독 최고 재판소에 대한 정보. 부록 Nr. 51 참조). 이에 의하면 제 11차 사회주의 통일당 당대회에서의 결의사항이 법원의 활동과 재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동독에서 위에 언급된 특정한 불법 행위들중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 시효만료라는 이유로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정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 연방 의회는 1993년 1월 21일 “SED 정권하의 불법행위에 대

한 시효 정지에 관한 법” (Das Gesetz über das Ruhen der Verjährung bei SED- Unrechtstaten)을 통과시켰다.

同법의 제 1조는, 과거 SED 정권하에 행하여진 불법행위들중 국가 또는 당 지도부의 명백한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 내지는 자유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에 배치되는 이유들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1949년 10월 11일 부터 1990년 10월 2일 까지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同법의 제 2조는, 舊동독의 형법에 의해 1990년 10월 3일 까지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행위들중 통일 이전에도 서독의 형법이 적용될수 있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이 1993년 9월 27일에 발효된 “형법 시효연장에 관한 법” (Das Gesetz zur Verlängerung strafrechtlicher Verjährungsfristen. 연방법률공보 제 1권)은 1992년 12월 31일 까지 동독지역에서 행하여진 범죄들중 형벌의 상한이 자유형 1년에서 5년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빨라도 1997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리고 형벌의 상한이 자유형 1년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빨라도 1995년이 경과해야 시효가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이러한 시효연장 조치가 취해지게 된 이유는 동독지역의 법원과 검찰이 통일이후 처리해야 할 사건의 폭주로 인해 아직 이러한 범죄행위들을 모두 형사처벌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SED 정권하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범죄행위들이 단지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에서 면제된다면 사법 당국의 처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1. 정권적 범죄행위

SED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각주의 형사소추 기관과 법원이 맡고 있다. 行爲地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의 대부분은 베를린주의 사법기관과 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소위 지역범죄(Bezirkskriminalität)는 동독 지

역 新設州들의 사법기관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다. 그의 SED 정권의 집권자들에 대한 수사와 소추는 연방 대법원 소재의 연방 대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베를린주에는 고등법원 소재의 고등검찰청에 “구동독 정부에 의한 범죄 행위 특별수사부”(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주 혼자 이 사건의 전부를 담당하기에 벅차 연방 정부와 서독 지역의 州정부들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각주 법무 장관 회의의 결의에 따라 주정부는 약 60명의 검사 또는 고급 수사인력 그리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0명의 수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사법경찰 분야에서도 위의 선례를 따라 행정공조협정이 체결 되었다. 이에 따라 “SED 정권하의 구동독 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소추와 통일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한 경찰 수사본부”(ZERV)가 설치되었다.

이 수사국은 연방과 서독 지역의 各州로부터 총 210명 (이중 연방측으로부터 40명)의 수사인력을 지원 받았다. 그리고 수사국 총 비용의 25%를 연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주에서는 “구동독 정부에 의한 범죄행위 특별 수사부”의 활동을 돕기위해 여러채의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권을 주었으며, 경찰 중앙 수사본부(ZERV)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사무실과 주거용 건물을 제공하였다.

베를린주에는 현재 약 1,700개의 해당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중 약 1,250개의 재판은 兩獨間 국경선에서 국경수비대 병사들의 총격에 의한 피난민들의 死亡, 傷害등에 관련된 재판이다. 그리고 또한 舊동독 법관, 검사들에 의한 法律歪曲에 대한 재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독지역의 新設州들에는 소위 지역범죄(Bezirkskriminalität)의 법적 청산을 위해 중점검찰청(Schwerpunktstaatsanwaltschaften)이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한 전문위원회에서 구동독 정부의 범죄행위 특별수사부와 중점 검찰청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기획, 관리하고 있다.

2. 국가보위부요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舊동독의 불법행위 청산시 특히 國家保衛部(이른바 “슈타지”)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큰 주목을 끌고 있다. 同 기관 요원들의 각각의 과거 임무와 활동에 따라 간첩죄 또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범죄가 형사처벌의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서독에 대해 간첩행위를 자행한 국가공안부의 주요직 요원들이나 비공식 요원들(Inoffizielle Angehörigen)에 대해서는 형법 제 94조에서 제 100a조 사이에 규정된 背叛罪(Landesverrat)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한 죄(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연방법원이나 다수의 州고등법원 그리고 연방 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배반죄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국제법상 또는 헌법상의 아무런 하자(瑕疵)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도 베를린 州고등법원의 신청에 의해 前 국가공안부 대외 정찰총국(Hauptverwaltung Aufklärung)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헌법상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연방 헌법재판소에 대해 법무성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통일전 이미 서독 형법에 의해 가벌성이 성립된 범죄에 대해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그 가벌성을 배제시켜 주거나 형사소추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통일로 인해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실제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뒤셀도르프 소재 노르드라인-웨스트팔렌 州고등법원은 前 국가보위부 대외정찰총국 책임자였던 마쿠스 볼프(Markus Wolf)에 대한 州고등검찰청의 訴提起를 인정, 그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同법원은 베를린 州고등법원의 회의적인

입장을 따르지 않고 연방 법원과 다른 州고등법원의 다수설의 입장에 합류하였다. 1992년에 이 사건들에 대한 주무기관인 연방 대검찰청에 의해 전 국가보위부 요원들과 그 동조자들에 대해 총 1,740개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 이외에는 형법상의 일반적인 범죄들이 형사처벌의 고려 대상으로 들어온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희생자들을 억압, 꺾박하고 심지어 그들중 일부를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국가보위부의 만행과 관련된 요원들의 불법 행위들이 형법에 따라 평가되고 그에 대한 사법상의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위부의 犯法行爲에 대한 형법상의 평가와 그에 대응한 처벌은 행위지의 원칙에 따라 베를린州와 신설주들의 사법소추, 형사소추기관이 맡아 담당하고 있다.

3. 통일관련 범죄

통일과 관련하여 국가에 총 수십억 마르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많은 수의 경제범죄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들중 대부분은 詐欺罪와 背任罪의 부류에 속하는 범죄들이었다.

일례로 예전 동구 경제협력 기구였던 COMECON에 속하였던 나라들간의 무역거래시 대금결제 수단이었던 이전 루블貨(Transferabler Rubel)를 독일 마르크화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교환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거액의 부정이 저질러 졌다.

그러나 예전 COMECON에 속하였던 국가들에 대한 동독측의 대외경제 신용을 보호하고 이왕에 이 나라들에 개척된 동독측 기업의 중요한 판매시장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 말까지는 이전 루블화를 통한 決濟制度(Das Transferrubel Verrechnungssystem)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비교.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서 제 5장 VI. 10 참조).

이 決濟制度는 특히 兩獨間에 화폐통합조약이 발효될 당시 많이 악용되어 형법상의 불법행위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통화수단인 루블화의 화폐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兌換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감독청(Prüfgruppe Transferrubel)의 활동으로 많은 수의 부정한 태환이 저지되었다. 그리고 발각된 부정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판들이 아직 진행중이다.

1990년 7월 1일 서독의 마르크화가 동독지역에 도입될 때에도 화폐교환과 관련하여 많은 부정이 저질러 졌다. 역시 이경우에도 "화폐교환 감독청"(Prüfbehörde Währungsumstellung)에 의해 많은 수의 악용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1993년 6월 30일 현재 화폐교환 사기와 관련하여 계류중인 재판은 최소한 250건에 이르고 있다.

통일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유형으로는 신탁청 그리고 舊동독의 정당과 대중단체(Massenorganisation)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배임행위(背任行爲)를 들 수 있다.

신탁청의 재산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배임행위에 대한 예로는, 관리대상에 들어있는 기업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배임행위들은 특히 신탁청내에 설치된 특별업무 담당참모진(Stabstelle Besondere Aufgaben im Direktorat Recht)의 감독 활동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었다.

舊동독의 정당과 대중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배임행위로는, 舊동독 인민군(NVA)의 군수장비를 낭비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입힌 행위나 舊동독에서의 정치적인 변화이후 "상업적 조정"(Kommerzielle Koordinierung)이라는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범죄등을 들 수 있다. 사법당국은 복잡하게 얽힌 위 계획의 구조를 파헤쳐 조사한 끝에

내,외국에 있는 유령회사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외국은행에 있는 비밀계좌들을 추적해 낼 수 있었으며 그 이면에 숨어있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들을 적발해 낼 수 있었다.

舊동독 정부에 의한 범죄행위 그리고 통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형사처벌은 주로 베를린주와 동독지역 신연방주의 사법기관에서 맡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서독지역의 州들은 인력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III. 復權을 통한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의 불법행위 청산

SED 정권하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은 자들에 대한 복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舊동독 불법행위의 수정 (修正 Revision)을 통해 현시점에서 잘못된 舊동독의 과거를 바로 잡고 또한 통일독일의 내적인 화해와 단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조약 제 17조에는 통일독일에게 예전 동독에서 정치적인 형사처벌의 희생자였거나 또는 법치국가의 원칙과 헌법에 反하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즉시 복권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연방하원의 독일통일 위원회 (Der Ausschuß Deutsche Einheit)는 1990년 9월 19일에 낸 보고서에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反하는 정치적인 핍박의 희생자가 있었던 다른 사례들의 경우에도 복권을 위한 법적인 근거의 문제가 검토되어 져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방 정부도 내적 통일의 확립을 위해 희생자들의 복권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의 희생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공산주의 불법국가에서 형사법적 핍박뿐 아니라 행정적, 직업적인 면에서도 국가의 횡포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

러한 불법적인 국가조치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도덕적인 명예회복과 아울러 현실적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방 하원은 1992년 6월 17일에 의결된 “공산 폭력정권下的 희생자들에 대한 名譽회복선언”(Ehrenerklärung für die Opfer der kommunistischen Gewaltherrschaft)에서 공산 폭력정부의 불법행위에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개인적인 희생이 40년간의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조국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했음을 인정하였다.(비교. 명예인정서, 부록 Nr. 52 참조).

원상회복 되어야 할 불법행위는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 비 물질적인 손실, 즉 생명, 건강, 자유, 개인적인 삶의 영역, 직업 그리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인 動機에서의 침해로 인한 손실,
- 물질적인 손실, 즉 정치적인 핍박이나 형사처벌 또는 다른 형태의 불법적인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해 입은 재산상의 손실.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국가 원칙 (Sozialstaatsprinzip)이 이러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원상회복 조치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때에 특히 평등의 원칙 (Gleichheitsgrundsatz)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원상회복 (Wiedergutmachung)은 민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미에서의 손해배상 (Schadenersatz)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사회적 동기에 의한 보상 (Ausgleich)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법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서로 상이한 여러형태의 손실에 대해 공평한 원상회복 (Ausgewogenheit bei den Wiedergutmachungsleistungen)이 이루어 질 것이 요구된다.

원상회복 조치시 주의해야 할점은 일부 특정한 손실의 보상에 우선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상회복 조치가 단지 물질적인 손실의 보상에 집중되고 비물질적인 손실 - 생명, 건강, 직업등 - 에 대한

보상이 등한시 되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원상회복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 입법의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져야 한다. 또한 전체 원상회복 조치에 있어서의 공정성(Ausgewogenheit)이 국민들이 국가의 조치를 정치적으로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100% 완전한 손해배상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국가의 원상회복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원상회복 조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구조적인 결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원상회복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때 특히 이 공정성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원상회복 조치에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인상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구소련 점령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와 소련군 군사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이 적지않았다. 그러나 국제법상의 이유들 때문에 독일측이 이러한 조치나 판결에 대해 사후 심사와 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었다. 때문에 1992년 12월 16일의 독일 수상 헬무트 콜과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보리스 옐친 (Boris N. Jelzin)의 구소련 점령군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들의 복권에 대한 공동성명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공동성명 전문, 부록 Nr. 53 참조). 이 공동성명서에는 부당하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과 무고하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이미 복권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러시아측은 복권을 위한 개별적인 신청안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독일 연방 정부는 그 사이에 구소련 점령군의 조치들을 취소하기 위한 수많은 신청안을 이미 해당 러시아 관청에 제출하였다.

1. 형법상의 복권

사법기관은 SED 정권하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형사소추처분의 희생자들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일 과거유산의 法政策的 청산에 기여하고 있다.

SED 정권의 과거불법을 청산함에 있어서 단지 그 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 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의 복권 문제가 반드시 함께 다루어 져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형사처벌에 의해 오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자유 박탈과 감금은 이들의 건강을 해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측의 보호와 생활에 대한 배려가 요망된다.

1.1 통일이전의 상황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형사처벌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측의 恣意的인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의한 엄격한 형식의 재판의 형태로만 이루어 지는데 반하여, 舊동독에서는 司法이 국가와 정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특히 스탈린주의가 강하게 지배하였던 SED 정권 초창기 시절에 형법이 사상적인 이견자(異見者)들에 대한 정치적인 핍박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한 예로 발트하이머 재판 (Waldheimer Verfahren)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정당 고위간부의 감독과 지도下에 특별법원의 즉결심판에 의해서 重懲役刑 (Zuchthausstrafe) 내지는 死刑까지의 重刑이 선고되었다. 이 재판에 관여한 법관과 검사들은 사전에 이미 당 노선에 충실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중요한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의 진행과 판결이 이미 당 지도부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었다. 예를 들면 한 재판에서 발터 울리히 (Walter Ulrich)라는 법관이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무기형 대신 사전에 결정된 사형을 언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정치적인 의견의 표명 때문에 잔혹한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53년 6월 17일에 있었던 한 데모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1968년 8월의 소련군의 체코 프라하 진주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2년 반의 가벼운 징역형이 선고 되었다; 1980년 1월 당 지도부에서 내려진 무단 국경월경자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관

청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1989년 10월 “글라스노스트, 장벽 철파, 자유선거 도입”이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는 이유로 6월간의 자유박탈형이 선고되었다.

국가형벌이 국가의 사회,정치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권력층의 이해관계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다른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SED 정권하의 사회에서도 형법상 본래의 의미에서의 범죄인들 (kriminelle Straftäter)이 있었다. 그들의 범죄행위로 부터 중요한 法益 (Rechtsgüter)과 사회의 평온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非 법치국가적인 시스템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에서 때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조약 제 18조는 舊동독 법원에 의한 판결들이 통일후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판결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통일조약 제 17조는 통일독일 입법자에게, 정치적인 형사처벌의 희생자였거나 또는 법치국가 원칙과 헌법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복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命하고 있다.

이미 舊동독에는 정치적인 변혁 이후부터 1990년 10월 통일전까지의 시기에 자체적으로 과거의 불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우선 확정된 형사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는 재판파기제도 (裁判破棄制度 Die Kassation)가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통일조약에 의해 舊동독 형사소송법상의 파기규정은 계속 유효한 것 - 다만 수정된 형태로 - 으로 인정되었다. 통일조약이 서명된지 며칠 후인 1990년 9월 6일 舊동독 인민의회 (Volkskammer)는 만장일치로 復權法(Rehabilitierungsgesetz 舊복권법임, 이하에서는 舊복권법으로 표기)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서독측과의 협상을 통해 이 법의 효력을 계속 확보하기로 결의 하였다. 동독측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과거의 불법을 광범위하게 청산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시도하였다. 때문에 이 법은 형사법적 복권뿐 아니라 직업적, 행정법적 복권에 관한 규정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舊복권법은 1990년 9월 18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날 동,서독 간에 통일이후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이 법이 계속 유효할 것이지에 대한 추가협정이 맺어졌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시간의 촉박으로 인해 단지 舊복권법의 규정중 형사법적 복권에 관한 규정과 행정법적 복권에 관한 규정들 중에서 정신병원 강제 수용자들에 대한 복권규정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舊복권법은 체계상 많은 결함과 불명확성 그리고 불합리한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두가지 만을 예로 든다면, 舊복권법에 파기제도가 흡수, 조화되지 아니하고 서로 상이한 선고기관과 재판절차를 가진 파기제도와 복권제도가 서로 병렬적으로 존재하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同법의 被복권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이 단지 拘禁者 支援法(Häftlingshilfegesetz)에 규정된 보상규정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적인 희생자들의 피해 복권에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외에 1990년 10월 3일 부터 동독지역에도 拘禁者支援法(HHG)이 직접 적용되어, 舊동독 사법기관의 불법에 의한 희생자들은 그들의 억울한 자유박탈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3가지의 서로 상이한 법적 구제수단을 갖게 되었다. 피해자 지원법에 의한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 올수는 없지만 동법 제 10조 4항에 기초한 증명서로 피해자의 구속이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조약에 의해, 과거 정치적인 탄압으로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자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過去政治的 拘禁者後援財團(Stiftung für ehemalige politische Häftlinge)이 설치되었다.

구소련 점령군의 군사재판에 의해 무고하게 수감되었던 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이유로 인해 독일 법원에 의한 재판파기나 복권이 고

려되어 질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拘禁者 支援法에 따라 구금자 지원담당 관청에 지원을 청구하는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이상의 불만족스러운 제반 법적상황은 1992년 11월 4일 발효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不法 清算을 爲한 第1次法律案” (Das Erste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을 통해 제거 되었다. 이 법률의 핵심 내용들은 제 1조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舊동독 형사소추 처분의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 약칭하여 刑事復權法 (Das Strafrechtliche Rehabilitierungsgesetz, StrRehaG)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1.2 형사복권법의 주요내용

同法の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들중 중요한 규정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 복권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1945년 5월 8일 부터 1990년 10월 2일 까지 동독지역에서 독일법원에 의해 내려진 모든 형사판결들이다. 이 형사판결들이 자유법치주의적 질서의 기본 원칙에 反하는 한 신청에 의해 불법적인 것으로 선고되고 동판결은 취소된다. 또한 형동록부에의 기록도 삭제된다. 그것으로 당사자의 전과기록이 말소되며 그의 명예가 회복된다. 특히 舊동독 법원에 의한 형사판결이 정치적인 핍박을 위한 것이었거나 판결시 언도된 형이 행위에 비해 너무 과중한 것이었을 때는 복권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 재판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복권법은 舊동독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 (犯罪構成要件)중에서 보통 정치적인 핍박을 위해 적용되었던 규정들에 대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반역적인 정보의 移轉, 반국가적인 인신매매, 노동쟁의의 선동, 반국가적인 선동행위, 불법적인 외국과의 접촉, 국외탈출, 병역의무의 회피 내지는 거부, 배반죄, 서방측을 위한 간첩행위 등.
- 1950년의 발드하이머 사건에 대한 판결은 강제적으로 취소된다.
- 과거 동독에서 불법적으로 정신병원 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들에 대한

복권과 보상도 이법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 계류중인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同 법의 보상규정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자유박탈에 대한 보상으로는 1달을 단위로 300 마르크씩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1989년 11월 9일 까지 동독지역에 거주하던 해당 피해자들은 구속에 관련된 계속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의 매월당 550 마르크씩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파기된 벌금형 판결에 의해 이미 지불되었던 벌금, 소송비용, 그리고 그의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등은 구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를 2:1의 비율로 환산하여 보상한다.
- 파기된 형사판결에 의해 재화가 압수되었던 경우에는 재산법의 기준에 따라 보상된다.
- 특별히 국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경제보조가 가능하다. 지원의 정도는 당사자가 입은 피해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현재는 매년 최고 8,000 마르크까지의 추가 지원이 가능함)
- 부당한 구속으로 인해 건강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는 연방원호법 (Bundesversorgungsgesetz)의 규정에 의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피해자연금 (Beschädigtenrente), 직업재해보상 (Berufsschadenausgleich) 그리고 환자원호 (Krankenversorgung)등이다.
- 피해자가 부당한 구금의 결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또는 구금과 관련한 손해로 인해 그의 유족에 대한 부양에 어려움이 생긴경우 그 유족들은 연방원호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또한 부당한 사형판결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형사복권법상의 보상은 구소련 점령군의 동독지역에서의 공산정권의 설립 내지는 유지와 관련하여 구금되었던 정치범들에게도 보장된다.

복권과 관련된 재판은 약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측이 되며 그중 대부분은 아직 계류중이다. 그외에도 구금자지원법에 의해 정치범으로 인정받은 약 8만명의 사람들이 형사복권법상의 추가보상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복권법의 제정으로 해당법원과 관청은 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되어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피해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同 법상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출될 액수가 약 2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직업상의 복권

직업복권법 (Das Berufliche Rehabilitierungsgesetz, BerRehaG)은 형사복권법을 보충하고 정치적인 형사처벌로 인해 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직업적상의 복권의 가능성을 마련해 주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2.1 통일이전의 상황

舊동독에 있어서 직업분야의 발전과정은 집권자들의 사회재조정과 권력 기반 구축을 위한 구도안에서 이루어졌다. SED 정권에 의해 특별히 장려, 육성되어진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교육과 선택에 있어서 매우 등한시 되었다.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 학교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사전 계획되어진 수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념적으로 내용이 규정지워진 규칙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공산정권의 체제하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던 불이익은 대다수의 舊동독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운명이었다.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지위상승 여부는 흔히 능력과는 관계없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때문에 주민들은 본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사회제도가 설정한 한계에 자주 부딪치곤 하였다.

구동독에서 정치적, 이념적인 이유로 인해 가해진 직업상의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기독교 신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권력층에 잘 못보인 사람들은 직업상의 지위상승 기회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해와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되었던 사람들이나 해외이주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교육, 직업생활에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거나 또는 심지어 직업생활이 금지되기까지 하였다.

그 외에 사회활동에 소극적인 사람들, 지배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 서방측과 접촉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국가기관, 특히 국가보위부에 대해 비협조적인 사람들도 직업적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직업상의 불이익의 정도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예를들면 SED 정권의 초창기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시험(Abitur)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곧 또한 대학교육으로의 길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물론 개별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差別事例가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70년대 말부터 정부와 당은 강경노선에서 후퇴하였다.

해외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직업상의 차별이 보복수단으로 가하여졌다. 舊동독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안에서의 감시받고 억압적인 생활과 궁핍한 소비생활로 인해 불만을 갖고 서방측으로의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로인한 국가존립의 붕괴를 막기위해 SED 정권은 여러가지 억압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해외이주를 막기위해 이에관한 법규정들이 180도 내지는 상당한 정도로 왜곡 적용되었다. 특히 국가보위부는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 활동하였다. 예를들면 同 기관은 해외이민 희망자들을 배척, 차별, 형사처벌하기 위한 비밀 전략을 마련하고 이의 구체적 시행을 명하였다. 이에의해 마련된 1977년에서 1988년 까지의 국가지령 (Die staatliche Direktive)을 보면 해외이주신청을 사전 방해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 직업관계의 재조정 내지는 금지를 명하고 있다.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 이러한 피해들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설

정될 수 밖에 없다.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차별과 여러가지 손해는 舊동독 국민들의 대다수가 감수해야 했던 운명이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일반적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즉 동독지역의 경제를 재건, 활성화 시킴으로써 그곳 시민들이 그동안 받았던 직업상의 일반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SED 정권하에서 개별적으로 심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즉 정치적인 핍박의 희생자들을 개별적으로 돕는 것은 통일독일 사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舊동독 공산정권의 형사소추처분으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대한 복권과 보상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不法清算을 爲한 第 2次 法律”(Das Zweite Gesetz zur Bereinigung von SED-Unrecht) 政府案이 1993년 5월 19일 연방하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률안은 주로 직업복권법 (Das Berufliche Rehabilitierungsgesetz)과 행정법상의 복권에 관한 법 (Das Verwaltungsrechtliche Rehabilitierungsgesetz)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同 법률안은 형사복권법을 보충하고 구동독 공산정권의 정치핍박으로 인해 직업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람들이나 불법적인 행정처분의 피해자였던 사람들에게 복권과 보상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同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복권을 위한 입법조치는 일단 마무리 짓게 된다(참고로 동 법률은 93년 3월과 4월에 연방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하여, 94.7.1일 발효되었다).

2.2 職業的 復權法 政府法案의 기본 원칙

同 법률안에 의하면, 구동독 공산정권의 정치핍박으로 인한 결과로 직업

생활이나 직업교육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보상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조치의 여부는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 판단된다. 즉 그당시의 손해가 오늘날에도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불이익을 주고 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同 법률안은 특히 다음과 같은 국가의 지원과 보상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 연금을 통한 보상조치
- 당해 被보상자들의 연령으로 보아 아직 직업을 가질수 있는 경우 직업교육(Ausbildung), 보충교육(Fortbildung) 그리고 직업전환교육(Umschlung)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
- 핍박으로 연유된 특별한 손해가 있는 경우의 보상조치

同 법률안의 중점은 연금을 통한 보상조치에 있다. 이에 따라 핍박을 받았던 기간, 즉 피해당사자가 핍박으로 인해 직업생활을 영위 할 수 없었거나 또는 보통 때보다 적은 수입만을 올릴수 밖에 없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핍박기간은 보통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기여금 납입기간과 동일시되며, 구체적인 연금액은 피해당사자가 핍박이 없었던 경우에 벌수 있었던 예상수입을 기초로 산정되어진다. 그리고 피해당사자의 연금법상의 법적지위는 동독지역에서 동일한 정도의 자질과 교육수준을 가졌던 노동자군에 準하여 보장되어진다.

또한 핍박으로 인해 연금보험에 대한 기여금 납입이 감소되었던 경우에는 이 기간에 대해서도 특별한 고려가 요청된다.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평가는 핍박 기간 대신 전체 보험가입기간동안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피해당사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액수중 가장높은 액수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만약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 추가원호제도와 특별원호제도 (Zusatz- oder Sonderversorgungssystem)에서 인정된 권리 또는 그 상속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3. 행정법상의 복권

구동독에 있어서의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결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不法清算을 爲한 第2次法律案”(아직 政府案)에서 규율되고 있다. 법치국가의 원칙들, 즉 正義의 원칙, 法安定性의 원칙 그리고 比例性의 원칙에 현저히 反하고 또한 자의적인 정치핍박을 위해 내려졌던 舊동독에서의 행정상의 조치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이익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법상의 복권을 위한 법은 이러한 행정상의 결정과 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立案되었다.

3.1 통일이전의 상황

舊동독 공산정권에 의한 행정상의 불법행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행되었다. 즉 크게는 국가의 사회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들 - 산업의 국유화, 民營 大,小기업의 해체, 수공업자들에 대한 핍박, 농업의 강제 集團化 조치등 - 로부터 작게는 일상적인 법침해에 해당하는 행정상의 조치들 - 운전면허의 자의적인 취소등 -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정치적인 핍박을 목적으로 취하여진 불법적인 행정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강제이주 (強制移住 Zwangsaussiedlung) 조치이다. 1952년 부터 1961년 사이에 내륙간 경계선 지역에서 2번의 대대적인 강제이주 조치가 있었다. 이때에 구동독 정치권의 미움을 산 많은 시민들이 집과 토지를 잃어버린채 내륙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해야만 했다. 그이후 1980년대에도 몇번에 걸친 강제이주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러한 강제이주조치는 의도적인 정치핍박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예를들어 일부 당사자들에게는 불과 강제이주 몇시간전에 그 사실이 통보되었고 몇몇의 경우에는 결정의 관철을 위해 심지어 무장병력이 투입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추대상자의 결정은 행정당국의 완전한 恣意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이 주로 내용이 애

대한 일반규정 (Generalklausel)으로 되어있어서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적용이 가능했고 따라서 정치적인 꺾박을 위해 많이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考慮(Erwägung)나 推定(Mutmaßung)도 강제이주의 사유로 충분했다. 이러한 舊동독 행정기관의 행정결정과 집행은 당시의 정치권력자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유형적인 이유들로 강제이주조치를 命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이고 막연한 이유들이 반복되어 언급되고 있다: “부정적인 입장”, “토론에 있어서 부정적임”, “용인할 수 없음”, “부르조아 경향”, “정치적으로 믿을만하지 못함”. 심지어 과거 미군에 의해 포로생활을 한 경력도 강제이주를 命하기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되었다.

1952년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은 사회주의의 건설 (Aufbau des Sozialismus)을 위해 농업의 집단화작업에 착수할 것을 결의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공세와 농업생산협동조합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en, LPG)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誇示的인 다양한 특혜조치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말까지 많은 농민들이 위의 집단농장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차별정책 - 비료 등의 할당시 따르는 차별, 引導義務量의 부당한 증가, 농기계류에 대한 이윤없는 사용허가의 취소 - 도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1960년 구동독 공산정권은 유례없는 초강경적인 강제집단화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천명의 政治運動員(Agitor)들이 농촌으로 파견되어 농민들을 농촌으로 부터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많은 경우 농민들이 하찮은 이유들로 체포되어 집단농장예의 가입을 서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풀려날 수 있었다. 끝까지 집단농장예의 가입을 거부하던 농부들은 확성기나 대자보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 탄핵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강제집단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마을들이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농민들의 탈주를 막기위해 이들의 銀行計座가 국가에 의해 압수되었다.

舊동독 “관세와 외환법” (Das Zoll- und Devisenrecht)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이나 외환 또는 금전에 대해 廣範圍한 신고의무와 당국의 허가를 要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수출입 상품뿐만 아니라 비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금지와 제한이 가해졌다. 만약 이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청은 자립적으로 그리고 정식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당해 물품이나 금전을 沒收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많은 경우에 관세당국의 이러한 권한이 사용 나아가 남용되었다. 한 좋은 예로 서독의 한 화물운송차가 동독국경을 떠날 당시 법에 규정된량보다 약 20 리터 정도 더많은 벤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동독 관세당국에 의해 몰수되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동독측은 외화를 벌기위해 1973년 동독측의 예술품과 골동품들을 서독의 애호가들에게 팔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술품과, 골동품, 그외 예술성을 가진 다른 물건들을 수출, 수입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 예술품과 골동품취급 유한회사 (Die Kunst- und Antiquitäten GmbH)가 설립되었다.

동독당국은 값진 고가품의 예술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박물관들에게 그들이 소장한 예술품들을 내어 놓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박물관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쳤고 또한 외국에서 부유한 서독이 가난한 동독을 돈으로 사버린다는 평판이 들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조치는 성과없이 중단되었다. 그대신 동독 당국은 개인소장 예술품들을 획득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세와 재산세에 관한 법을 부당하게 악용하였다. 일단 예술품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同 법에 의해 모두 예술품 去來人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세금액의 책정은 구동독 현행 세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것이 아니라 그들이 所藏하고 있는 藝術品들이 그 희소성과 가치에 따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세금액의 책정을 위한 소장 예술품들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동독내에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서방측에서의 거래가격이 기준이 되었다. 이와같이 동독의 세무당국은 개인 소장 예술품들의 가치에 대한 과대 평가와 세금징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반면 서독측과의 예술품 거래를 통한 수익은 별로 달성할 수 없었다. 재산세를 책정함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터무니 없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골동품들이 대물변제로서 압수되었고 위에 언급한 예술품과 골동품취급 유한회사에 의해 처분되었다. 당사자들에게는 밀린 재산세를 납부하고 골동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세무당국의 세금책정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나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舊동독에서는 정식 형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시민들의 자유가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들면 정치적인 핍박이나 그외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시민들을 정신병자 치료시설 (Die psychiatrische Anstalt)에 강제수용했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시설에의 강제수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을 위한 자유박탈은 여러가지 형태로 행하여 졌다. 예를들면 1961년 8월 24일에 내려진 “거주제한에 관한 명령” (Die Verordnung über Aufenthaltsbeschränkung)에 기초한 당국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이 명령에 의해 郡法院(Kreisgericht)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교육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었다. 동독측의 통계에 따르면 1961년 부터 1967년 사이에 약 6,000명의 시민이 노동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그러한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핍박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졌음이 밝혀졌다.

舊동독 행정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정부는 “행정법상의 복권에 관한 법률안” (Der Entwurf eines Verwaltungsrechtlichen Rehabilitierungsgesetzes, VwRehaG)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연방정부는 지난 40년동안 동독 공산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행정상의 불법행위가 수정 내지 보상되어 질 수는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舊동독 행정당국에 의한 불법적인 행정조치가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은 현실에 직면하여 同 법률안은 오늘날 까지도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기고있는 중대한 불법조치들만을 선정하여 이에대한 적절한 원상회복과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3.2 행정법상의 복권에 관한 정부법안의 기본 원칙

우선 통일조약 제 19조에 의해 舊동독 행정당국에 의한 결정들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同 법률안에 의한 행정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다:

- 행정처분이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때,
- 행정처분이 당사자의 건강에 대한 침해, 재산법상에 따른 재화에 대한 침해, 그리고 직업복권법에 따른 직업생활의 계속적인 영위에 침해를 가져온 경우,
- 행정처분이 동반한 중대한 손해가 오늘날에도 당사자에게 계속 불이익을 끼치고 있는 경우.

그리고 同 법률안은 경계선 지역에서 행하여졌던 強制移住措置와 그에 관련된 재산상의 침해행위도 법치국가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였음을 明文으로 밝히고 있다.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와 조치는 발생한 손해의 종류에 따라 1) 연방원호법 (例: 병자원호, 피해자연금, 직업손해보상, 유족원호), 2) 재산법, 3) 직업복권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非형사처분적인 행정조치로 인한 자유박탈 중에서는 정신병자 치료시설에의 강제수용만이 형사복권법에 의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형사복권법 제 2조). 그러나 同 법의 개정을 통해 다른형태의 부당한 자유박탈 조치 (예를 들면 감옥과 다름바 없는 노역장 시설에의 강제수용과 강제노동)도

同 법에 의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IV.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

1. 통일 이전의 상황

독일 통일과정의 경제·사회·심리적 난제 중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한 가지가 미해결 재산 문제이다. 그 주된 원인은 1961년 베를린 장벽 설치시까지 서독으로 향하던 동독 주민들의 이주 움직임과 그 이후 서독으로 가려는 동독 주민들의 출국 희망에 대해 취했던 동독 정권의 대응 조치에 있었다. 사실상 피난민들은 정치적 형사 처벌 조치로서 일부는 법적으로, 일부는 경제적으로 재산을 몰수 당했다. 출국 희망자들은 그들의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강요되었다. 나아가 정치적 동기가 다분한 형사 처벌의 일환으로 농업 분야의 집단 농장화나 기타 여러 사안에 걸쳐 재산 손실이 일어났다. 이와같은 재산 손실은 개별적인 정치적 박해 또는 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부가하여 소련군 점령 시대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재산 몰수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미해결 재산 문제라는 복합적 맥락 속에서 별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갖고 있는 의의를 일별해 보기 위하여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수치와 자료를 조감해 보아야 될 것이다. 소련군 점령 치하에서 1948년도 산업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던 7,000개 정도의 산업체와 중소 기업체가 몰수되었고 총 3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소위 '민주적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몰수되었으며 소련에 대한 전쟁 배상 조치로서 총액 50억 Mark에 달하는 공장이 해체되고 213개의 대기업체가 소련식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동독이 건국된 1949년부터 1990년 통일시까지 취해진 각종 조치에 관한

한, 비록 모든 사안에 대한 수치는 없지만 대강 다음과 같다.

- 동독의 발표에 따르면 소위 구서독인 소유 약 68,000 건의 부동산 (그 중 45,000건은 지상 건물이 없음), 약 2,000건의 기업 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약 2억 6,000만 Mark의 예금액이 잠정적으로 국가관리하에 두었다.
- 1953년 6월 10일 이전까지 허가 없이 동독을 떠나 버린 사람들의 재산은 몰수된 후 인민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재산으로는 약 31,000건의 부동산, 2,700개의 공장, 2억 Mark의 예금액 등이었다.
- 1953년 6월 11일부터 1989년 7월 31일 사이에 허가 없이 동독을 떠나 버린 사람들의 부동산 약 80,000건 및 예금액 13억 Mark는 국가의 신탁 관리에 처했다. 이러한 재산의 일부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거나 시의 적절하게 인민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는데 자세한 통계치는 없다.
- 1972년 약 12,000개의 반민.반국영기업체가 인민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었다. 1949년부터 1972년까지 몰수되어 인민 공유재산이 된 기업체와 출자 기업에 관한 자세한 수치는 알 수 없다.
- 불순한 간계를 통해 취득된 재산 및 반법치주의 국가적 형사 소추의 일환으로 단행된 재산 몰수에 관한 수치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재산법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기준은 '1990년 6월 15일자 동.서독 정부 간 미해결 재산문제의 처리를 위한 공동 성명서'에서 확정되었다. 이 공동 선언은 통일 조약 부속 문서 제 III 편에 수록되어 법률 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기준으로는 특히 재산권 반환의 기본 원칙, 정당한 구입의 사실 여부, 소련군 점령 치하 몰수 재산의 반환 불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공

동선언은 1990년 9월 29일 동독 법인 미해결 재산 문제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서 통일 조약과 함께 발효되었다가 연방법으로 인수되었다.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은 1949년 10월 7일 이래 동독 영토에 있던 재산으로서 아무런 보상금 없이 몰수된 재산이면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동독의 각종 재산 몰수 상태를 총망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서독 시민이나 외국인으로서 - 동독 지역을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떠났거나 동독 지역에 결코 거주한 바 없기 때문에 -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지 못했거나 활용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감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불이익을 특정 방법으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동독인, 서독인, 외국인들이 동등하게 당한몰수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의 예외 사안이 반환청구권이다. 예컨대 건물을 임대료로 비용 충당을 할 수 없거나 몰수, 소유권 포기, 중여, 상속 거절을 통한 인민공유재산화로 당면한 부채가 상당하여 지상건물이 있는 부동산이나 건물을 인수해야 할 경우나, 불순한 간계 때문에 권리 상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출국 희망자가 사전에 재산을 매각하거나 포기한다는 조건부로 출국 허가서가 발급된 경우를 의미한다. 취득자 자신이 불순한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구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며, 불순한 수단이 제3자 또는 국가기관에 의해 동원되어 있는 한 구비 요건으로서 충분하다. 또한 재산법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5월 8일까지 나치스 폭정 시기에 있었던 강요성 재산 손실을 반환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형사 법적 복권보상법 및 현재 준비 중인 행정법적 복권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치주의 국가에 위배되면서 수행된 형사법, 질서위반법, 행정법상 판결의 취소와 관련된 재산 역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었다.

재산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5월 8일부터 동독이 건국된 1949년 10월 7일까지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을 근거로 재산이 몰수된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치스 폭정기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박해에 의한 재산 손실의 반환 및 법치주의 국가에 위배되면서 수행된 형사법, 질서위반법, 행정법상 판결과 관련된 재산 손실의 보상에는 재산법이 적용된다.

점령법 또는 점령고권을 근거로 몰수된 재산의 반환 여부에 관한 사안은 통일 과정의 외적 측면으로서 소련측에게는 협상할 수 없는 요구 사항이었다. 소련은 “독일 관계 최종 처리에 관한 조약” (2+4 조약)을 협상하고 이와 관련된 양국간 회담에서 과거 구동독 점령 지역에서 재산 문제 및 토지 문제에 관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가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명백히 주장하였다.

재산법은 위에 열거한 취소 사안 외에 아직 상존 하는 국가의 강제 관리 상태 역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953년 6월 10일까지 허가 없이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소위 국영 신탁 관리 (피난민 재산, AO-2-사례)
- 전쟁이 끝난 1945년 5월 8일 현재 이미 서독 또는 서베를린에 주거지 또는 상주지를 갖고 있던 독일 국적의 소위 구서독인 소유 재산, 1953년 6월 10일까지 합법적으로 동독을 떠난 사람의 재산, 동독 지역 이외의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953년 6월 10일까지 (예컨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한 잠정적인 국가 관리 (일명 제6조 사안)
- 종전 당시 동독 지역에 있던 외국 재산에 대한 국가 관리

이러한 관리는 제2차 재산법 개정 법률과 함께 199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

재산법의 목표는 사회복지를 감안한 이해의 균형화에 있다. 따라서 반환

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반환이 사회적, 경제적 또는 객관적 근거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현 점유자가 소유권 또는 물적 이용권을 정당하게 구입했을 경우이면 그 적용의 한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현상태를 보호해 주는 이해관계가 반환을 해주는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되는 사회복지 친화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원소유권자에게 보상청구권이 부여된다. 반대로 1989년 10월 18일 이후의 구입 거래일 경우, 비록 구입자가 구입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제2차 개정 재산법은 일부 예외적 정황을 도입하여 어느 정도 변경 상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 주된 내용은 만일 1989년 10월 18일 이후에 구입 거래된 경우라 할지라도 a) 1989년 10월 19일 이전의 구입이 서류 상으로 신청되었거나 서류철과 함께 정연하게 거래되었을 경우, b) 동독의 한 시민이 사설 수공업자 또는 사업가로서 인민공유권을 산업용으로 구매했을 경우, c) 구매자가 1989년 10월 19일 이전에 상당 규모의 가치 증식용 또는 원형 보전용 투자를 했을 경우, 구매자의 합법 취득 여부가 경황 참작의 중대한 결정 사안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합법 취득 (Redlichkeit란 개념은 민법권 제 932조의 선의의 취득 (Gutgläubigkeit)이란 개념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재산법 상의 합법 취득이란 동독에서 적용되던 일반 법률 규정과 절차 상의 기본 원칙 등이 준수되었다는 사실, 즉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구입자가 몰수된 부동산이나 국가 관리 하에 있는 부동산의 매각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불법 취득 (Unredlichkeit)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의 반환에는 재산법의 특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 반환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수 규정의 목표는 기업이 기업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한 기업체는 반환 시점에 처한 상태와 함께 오로지 전체로서 반환된다. 즉 관리자가 단순히 기업의 일부를 분리 요청할 수 없다. 단, 기업체가 이미 폐쇄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재산 현황이 매우 악화되었을 경우, 법정 최소 자본의 부채 초과 상태 또

는 불충분한 자금 준비 상태는 기업이 반환될 때 조정금 지불을 통해 조정된다. 수익 현황이 매우 악화되었을 경우, 재 사유화된 기업체로 하여금 시장경제에의 공정한 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금 지불이 보장된다.

초기의 여러 가지 난점이 해결된 다음, 지금까지 다수의 몰수 기업체가 반환되었다. 기업 반환 청구권 행사를 위해 신청된 총 13,103건 중, 7,976건이 처리되었다(1993년 7월 현재).

재산법을 근거로 하는 재이전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 정지 처분 및 허가 발급 정지 조치로 확보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현 소유자로 하여금 반환될 재산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보 장치가 투자의 장애 요인이 되지못하도록 이미 통일 조약의 일환으로 투자법을 확정해 놓았다. 그 내용은 과거 인민 공유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재이전이라 할지라도 a) 만일 해당 부동산이나 건물이 특수한 투자 목적, 즉 일차리의 확보 또는 창출 (제조업 공장 또는 용역 업체의 설립)에 필요할 경우, b) 주거지 조성 또는 특정 인프라스트럭처의 실현에 필요할 경우에는 과거 인민 공유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재이전은 성립되지 않는다. 후일 기업의 투자 우선에 관한 규정이 투자법에 도입되었다 (투자 우선에 관한 사안은 본서 제 5장 II, 3.2.3 을 참조할 것).

기존 임대 관계 또는 이용 관계는 보상 및 국가 관리의 해제와 무관하다. 왜냐하면 임대자 또는 이용권자가 계약체결시 합법적인 절차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법적 관계는 미해결 재산 문제 처리 관청의 확인 통지와 함께 해제된다. 재산권은 재이전 및 국가 관리의 해제에는 일련의 부대 결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같은 것은 a) 만일 가치 증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조정, b) 기존 부동산 담보권의 인수, c) 인민 공유재산으로 전환될 때 소멸된 부채의 상환금 확정, d) 구입자가 구매가격을 지불했을 경우에 대한 반환 등과 관계된다.

3. 보상법

3.1. 법적 근거 및 목표

보상법은 미해결 재산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제정 상의 최고의 절정임을 뜻한다. 보상법의 목표는 서독의 책임 영역이 아니었던 과거 소련 점령 지역/ 동독에서의 무보상 몰수 행위 및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함에 있다. 미해결 재산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약칭 보상법 Vermögensgesetz)은 권리자에게 재산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자가 재산의 반환 대신 보상금 지불을 선택했을 경우, 권리자에게 보상금이 지불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그 재원 조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불이익 처분을 받고 감액된 국가 관리 하의 금전 재산에 대한 규정 역시 재산법을 통한 법률 규정과 함께 처리되도록 유보되었다. 보상법은 1945년부터 1949년간 소련군 점령 당시의 몰수 행위에 대해서도 조정금이 지불될 것을 규정해 놓았다. 전독 입법기관인 통일 연방 회의는 전술한 1990년 6월 15일자 “동.서독 정부간 미해결 재산권 처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 결과, 보상법과 함께 동독의 관련 사안인 원상 회복을 위한 보상법의 결합이 없어지게 되었다.

3.2. 연방 헌법재판소의 기준

연방 헌법재판소는 1991년 4월 23일자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보상법의 한계를 설정했다.

“입법기관은 다른 국가의 통치권이 책임져야 할 불법행위의 원상 회복을 규정화함에 있어 이미 전반적으로 자유재량에 따라 법률을 형성할 수 있는 매우 방대한 활동의 여지를 갖고 있다. 원상 회복은 개별 기본권의 초과 유출 상태가 아니고 ‘원상 회복의 근원’은 전적으로 법치주의 국가 사상 및 복지 주의 국가 사상에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기본원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자국의 헌법질서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국에 있는 재산과 관계되는 한, 무보상 몰수행위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보상조치는 독일의 국제보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헌법상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상법 규정화의 기준은 기본법 제14조 3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 및 복지국가의 원칙이다. 연방 대법원은 몰수 재산 반환의 기본 원칙이 보상 금액 책정에도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입법기관의 구속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명백하게 밝혀 놓고 있다. 즉 논의 대상 몰수 재산에 대한 완전 보상은 기본법의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 반대로 입법기관은 일반적 국가의 임무로 간주되는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 반대로 입법기관은 일반적 국가의 임무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한 재정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기관은 - 소유권 관련 피해뿐만 아닌 - 원상 회복되어야 할 피해의 총액을 참작할 수 있다. 소유권의 피해 현황을 파악할 때에는 해당 기간 중, - 생명, 건강, 자유, 직업 승진 등 - 기타 재산 관련 사안 역시 악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도 참작되어야 한다.

신연방주의 재건에 따르는 과제 역시 신중히 참작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방 헌법재판소는 동독의 경제적 파산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독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3.3. 정치권의 준비 및 정부안 작성

보상법 제정의 사전 작업은 1991년부터 착수되었다. 연립 정부 원내위원단의 각 위원회와 실무단은 이미 입법 절차의 사전 준비로서 다음과 같은 것에 집착하였다. 1992년 7월 1일 “게어스터 위원회” (연방 의회 Gerster 의원이 위원장인 정부 여당 위원회)는 보상법에 관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연방 정부는 이 기준치와 기타 결의를 기초로 1993년 3월 31일 보상법 초

안을 결의했다. 연방 정부는 입법 절차를 밟는 동안 나치스 치하의 피박해자들이 겪은 심한 인간적 숙명을 참작하는 규정이 계속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과거 인민 공유재산의 원소유권자에 대한 농지 구입 가능성이 법적으로 규정화될 수 있는지 계속 검토될 것임을 안내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3.4. 법안의 기본 개념

보상법의 초안의 핵심은 보상금 지불 및 조정금 지불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용 재산세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다.

보상금 책정의 산정 기준은 기업 재산일 경우 1935년도 과세표준 가격, 부동산 및 농림 재산일 경우 1935년도 과세표준 가격의 1.3배, 금전 지불 청구의 경우 DM 금액의 절반이다. 만일 산정 기준이 10,000 DM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점감된다. 1945년 이후 1949년 간의 몰수 재산에 대한 조정금 지불은 1949년 이후 몰수 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불에 준한다.

보상금 지불과 재산 반환 사이의 심한 불균형 상태는 보상금 청구권자 및 조정금 청구권자를 위한 실물 가치 상당 수취인의 연대 기금 지불을 통해서만 완화되도록 한다. 재산세 공과금이 연대 협약식 조정금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재산세 공과금은 반환 재산 가치의 실질 가치에 따르며 실질 가치는 일괄처리 기준에 따라 산정 된다. 재산세 공과금의 산정 기준은 1990년 10월 3일까지 계속 기장되어 온 1935년도 과세표준 가격 및 보상 가격이다. 이러한 가격은 상이한 승수를 기준 일인 1990년 10월 3일자 시가에 곱한 다음 산출된다. 승수는 이용도에 따라 각각 변화된다. 재산세 공과금은 1996년부터 납부 의무가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재투자”될 수 있다. 재 사유화된 기업체가 매우 어려운 경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배려하여 기업체에 대한 재산세 공과금을 통해 어느 정도 용이화가 달성되도록 하며 재산세 공과금이라는 부담 때문에 기업체가 또다시 조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구 독일 영토로부터 추방된 후 구동독 지역에 계속 상주하고 있는 실향민에 대해서는 4,000 DM의 일회성 증여금 지불이 보장된다.

3.5. 보상금 및 조정금의 재원 조달

보상법 초안은 국가 예산과 관계없이 보상금의 재원이 보상 기금에 의해 조달되도록 한다는 통일 조약의 설정 기준을 실현하는 것이다. 즉 보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 없이 균형을 이룩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의 중립성).

보상 기금의 재원 조달에는 보상청구권자는 물론, 현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우선 순위 때문에 반환될 수 없는 재산 역시 기금 조성의 대상이 된다. 그와 같은 대상은 신탁청, 연방정부가 신탁 관리하고있는 구동독 재정재산 및 구동독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들이다. 나아가 부담조정금의 환수금을 비롯하여 비교적 의미가 약한 기타 원천 역시 재원조달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보상기금은 그 절반이 공공기관에 의해, 그 나머지 절반은 재산부과금 및 부담조정금의 환수와 같은 비공공분야에 의해 충당된다.¹⁾

V. 舊동독 국가보위부 자료에 관한 法律

1. 정치적인 목적

舊동독 국가보위부 자료에 관한 법률 (Das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이하 국가보위부 자료

1) 94.9.23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보상법에서는 상기보상금 재원조달을 위한 재산 부과금은 완전 취소되었으며, 보상액은 당초 125억 마르크에서 180억 마르크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중 110억 마르크를 연방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

법 Das Stasi-Unterlagen-Gesetz) 은 SED 불법정권이 유산으로 남긴 과거의 정치적인 짐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즉 同 법은 Stasi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확보하고 40년동안의 공산불법정권이 남긴 결과들을 청산하는데 그 제정목적은 두고 있다.

국가보위부는 178 km의 두께에 해당하는 약 600만명에 대한 기록을 담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남겼다. 同 기관의 희생자들에게는 국가보위부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알 수 있도록 자료에 接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그들의 인격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同 자료는 同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公共的, 司法的 청산을 위해 세밀하게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2. 통일조약의 규정들

통일조약은 국가보위부 자료의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同 기관의 희생자들의 요구나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만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한 규정들이었다. 때문에 통일조약 부속의 정서(附屬議定書) (Die Zusatzvereinbarung zum Einigungsvertrag)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동자료의 처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이 명시되었다. 이에따라 1991년 12월 29일 국가보위부 자료법이 제정, 발효되었다.

3. 국가보위부 자료법의 주요내용

국가보위부 자료는 연방수탁청 (聯邦受託廳 Das Amt des Bundesbeauftragten, 흔히 가우크관청 Gauck-Behörde로 불림)에 의해 중앙 관리되고 있다. 연방수탁청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보위부 자료는 동자료가 그들의 합법적인 소유물이 아닌이상 지체없이 신고하여 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개인은 국가보위부 자료에 자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의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보위부가 자기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이든 또는 우연한 기회에서든 수집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정보내용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當事者 (Betroffene 국가보위부의 의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대상자)나 第三者 (Dritte 당사자 이외의 정보피수집자)는 신청에 의해 그 정보를 수집한 국가보위부 要員이나 密告者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교회 협력자들, 지도적인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과거 국가보위부와 협력여부에 대해 심사가 행하여질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후까지 계속되지 아니한 과거의 협력은 아무 문제삼지 아니한다.

형사소추기관은 형법상의 중범죄, 특히 구동독공산체제와 관련된 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개인관련 자료가 담겨 있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비밀정보기관 (Nachrichtendienst)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개인관련 자료가 담긴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만약 同 기관이 그러한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남기지 아니하고 즉시 연방수탁청에 제출하여야한다. 그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비밀정보기관은 간첩행위, 간첩행위방지, 폭력적인 과격주위자나 테러리스트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과 이용이 가능하다.

연방수탁청은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동독 新聯邦州에 지부를 둔 연방기관이다. 同 관청의 長인 聯邦수탁청장 (Der Bundesbeauftragte)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이며 다만 법률에 의한 구속만을 받는다. 또한 신연방주에서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문기관이 결성되어 그의 직무수행을 돕고있다. 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은 국가보위부 자료를 담당할 州수탁청장 (Der Landesbeauftragte)을 자체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가보위부 자료법은 국가보위부의 과거행적을 역사적, 정치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同 기관의 자료에 개인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자료들은 학문연구, 정치교육, 언론, 방송, 영화제작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4. 연방 국가보위부 자료 전담관

同 기관에 1993년 5월 까지 거의 180만건의 문서에 대한 정보제공, 문서 열람, 문서사본의 교부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거행적 조사등을 요구하는 신청안이 제출되었다. 이중 1993년 5월 까지 종국적으로 처리된 건수는 65만건 이상에 이른다.

국가보위부 자료법이 발효,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중간평가를 내린다면 同 法은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본래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연방 국가보위부 자료 전담관 (일명 '가옥' 관청)에 제출된 신청안의 수가 말해주는 것 처럼 국민들에게도 무리없는 수용과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5 장 경제·사회·환경 통일의 달성

I 통일이전의 상황: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

1. 80년대 동독 경제의 위기적 상황

오늘날 접근가능한 모든 자료들은 80년대 동독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 동독경제의 생산수준은 서독의 생산수준에 훨씬 뒤떨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여러 산업부문의 자본스톡(Kapitalstock)¹⁾이 노후화되어 사용 불능한 상태였고, 사회 간접 시설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었다. 대부분의 생산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으며, 생산은 일방적으로 구 코메콘(COMECON) 국가들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공업 부문은 과도하게 팽창을 보인 반면, 서비스 부문은 아주 소홀히 취급되었다. 민간 주도, 기업, 경쟁등 시장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조건들은 - 사적인 지하경제를 제외하고는 -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가격형성 및 시장상황은 정치적인 계획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는 에너지의 해배, 환경의 파괴, 능률 저하, 생산요소의 낭비를 초래했었다.

이때 스탈린에 의해 형성되었고 동독이 수용했던 바 중동부 사회주의 유럽국가들을 위한 경제·군사정책적 프로그램에 부응하여, 동독에서는 울브레히트 시대는 물론 호네커 시대에 이르기까지 건설 능력 및 투자재를 중앙집권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몇몇 생산재 산업, 군수 산업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산업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되었다. 이에 비해 소비재 산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잘 알려져 있듯이 무엇보다 공급 부족과 공급 차질을 초래했다. 오류투성의 비효율적인 농업정책으로 인해 1980년 이후부터 생필품을 위한 국가의 가격보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동독의 "생산되어진 국민소득"은 198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볼 때 1980년에서 1989년 기간 중

1) 액주 - 소득 중 플로우(흐름) 개념의 반대개념으로 공장 설비, 도로 등 이미 설치되어 있어 앞으로 계속 활용되어 소득, 즉 플로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함.

41% 증가를 보인 반면, 국내 투자 및 소비를 위해 사용되어진 '국민소득'은 같은 기간 중 23%의 증가만을 보였다. 이 양자의 성장 속도가 이같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동독이 1982년부터 "절대적으론" 수출 우선 정책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같은 수출 우선 정책으로 인해 긴급히 필요로 했던 상당량의 투자재와 소비재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외에도 수출 주도 정책으로 인해 국내 투자 설비를 확충하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으며, 또 소비자의 구매력을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재 및 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민간 가계들은 강제적으로 절약할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 낮은 노동생산성 및 고도의 잠재 실업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은 동독 국민경제의 노동생산성이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낮았다는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독은 당시 코메콘 국가들 중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 동독 국민경제의 생산성은 서독의 1/3 수준이었다.

동독경제의 생산성이 이같이 낮았던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같은 이유들은 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지닌 근본적인 약점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 투자의 인위적인 배분
- 통제분업 및 국제경쟁으로부터의 유리
- 차급차족경제의 추구 및 체제내적인(조직력)부족으로 인한 국영 콤비나트 생산품목의 과도한 비대화
- 미숙한 기업 경영
- 기업간의 경쟁 부재

- 기타 사회주의 체제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 (예를 들면 경직된 가격 및 임금체제, 혁신 부족, 융통성이 결여된 통화체제 및 금융체제, 과도한 국가지원, 전반적인 국가규제로 인한 성취욕 부족 등)

동독경제가 세계시장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 국내적으로는 자체 기술의 개발, 부품의 자급자족 및 백화점식 상품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모든 경영학적인 계산과는 동떨어진 비경제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밀전자 부문에서의 자체적인 생산능력을 야심적으로 발전시키고 거대한 비용을 들여 확충한 것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동독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영부문 및 공공 행정부문에 있어 잠재적인 실업율이 아주 높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 말해주는 바는 동독의 경제 및 행정부문의 경우 노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할 경우 인력을 훨씬 적게 투입하고도 능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동독의 잠재 실업률과 관련하여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가 1990년 7월 동독의 기업, 관청, 학문적인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당시 동독의 생산여건 및 판매여건하에서 동독 전체 경제부문의 잠재적인 실업자수는 14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동독경제의 생산여건 및 판매여건이 - 시장경제적으로 - 변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고되어야 할 수는 이 추정수치의 두배에 이르는 수, 즉 전체고용의 약 30%에 이르는 3백만명에 달했다. 그 당시 벌써 이같이 엄청난 것으로 여겨졌던 이 수치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현저히 낮게 추정된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당시의 잠재적인 실업률에 대한 조사가 설문대상의 콤비나트 및 기업들의 1991년까지의 고용계획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그 이후 필연적으로 전개된 계속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IFO 경제연구소에 의해 밝혀졌던 이 대략적인 수치는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동독의 노동계로 인해 후에 통일독일의 경제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이 걸머져야 할 부담이 얼마나 컸

었던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3. 일방적인 대외무역정책과 불충분한 국제경쟁력

동독은 아주 낮은 정도로 국제 분업에 편입되어 있었다. 당시 동독의 대서방 교역량은 동독 전체 상품교역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서독과의 교역이었다.

동독의 대서방 수출은 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동독은 외환사정의 악화로 종종 전체경제의 생산코스트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수출이 이루어졌다.

동독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구 코메콘 국가, 그중에서도 구소련이었다.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은 단기·중기적 통상협약에 기초하여 쌍무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역가격은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었고, 이전 루블화(Transferrubel, 인위적인 정산단위)로 대금결제 that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조차 경제적인 이점에 기반을 둔 진정한 의미의 국제분업은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구소련을 비롯한 코메콘 국가들과 동독간의 무역은 수십년간 그 규모가 고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판매를 보장해 주었다. 구 코메콘 국가와의 동독 교역량은 동독 전체 대외교역량의 약 2/3를 차지했으며, 이중 구소련과의 교역이 동독 전체교역량의 40%를 차지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으로부터의 동독의 원자재 수입은 (가격상승으로) 정체를 보인 반면, 동독의 수출은 80년대 중반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물량면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그 결과 80년대 말 동독에서는 국내생산을 투자 및 민간소비에 사용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코메콘 국가와의 교역은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동독은 하이테크 상품과 같은 현대적인 교역물품들을 통해 구 코메콘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가격우위를 확보하고자 시도했다. 한편으로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동독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은 물론 서방 선진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침체를 보였다.

1987년 동독의 무역액은 그 규모면이나 상품구조면에서 서방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낮은 수준에 있었다. 당시 몇몇 국가의 1인당 무역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동독	3,525 달러
벨기에/룩셈부르크	8,870 달러
네델란드	10,130 달러
스위스	12,570 달러
오스트리아	16,170 달러

이러한 교역추세는 동독이 “상품의 낮은 질”로 인해 자국 상품을 서방 시장에 내다 팔기가 점점 어려워졌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무엇보다 외환수익율(1 마르크당 국내 가격에 대한 수출상품의 매각 대금)이 점점 하락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970	0.563
1980	0.454
1985	0.275
1988	0.246

동독상품의 수출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은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DM)의 내부 교환율에서도 알 수 있다. 1970년 동독 마르크화 대 서독 마르크화의 교환율은 1.7 : 1이었으나, 1976년에 2:1 이상, 1985년에는 2.5:1, 그리고 1988년에는 4.4:1을 기록해 동독 마르크화의 대외 가치가 점점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4. 주민들의 공급상황 악화 및 개별 계층의 불이익

80년대 초부터 극도로 악화된 대외 부채, 구 코메콘 국가들중 원자재 공급국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대외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동독자체의 비효율적인 계획경제적 구조는 1982년부터 동독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본생활품의 공급은 보장되었으나, 자동차, 가전제품, 패션 의류, 홈 워크 제품(목재, 시멘트 등 건축자재)을 비롯하여 자동차 수리, 택시 이용 등 고부가가치의 상품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또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 예를 들어 승용차 한대를 구입하려면 동독 주민들은 10년 내지 15년을 기다려야 했다. 동독정부는 공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집권식의 개별조치들(예를 들면 소비재에 대한 특별 공급 계획 수립, 가격 인상 조치, 서방 상품의 수입, 고상한 상품만을 고가로 또는 태환(兌換) 가능한 통화를 받고 판매하는 특별 상점설치 등)을 시도해 보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동독주민들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구매력 과잉 현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유통성이 결여된 동독의 유통구조 및 판매구조는 공급차질을 해소해 주는데 뚜렷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독이 또 “사회주의의 업적”이라고 자주 내세웠던 바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도 원칙적으로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결함을 노출시켰다.

과거 동독과 현재 독일의 수입 구조 및 사회보장제도를 비교해 보면 특히 과거 동독에서는 연금 수혜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불리한 상태에 있었음이 드러난다. 1989년 말 동독 연금수혜자들의 월 평균 노후연금은 겨우 450 마르크였는데, 이는 당시 동독에서 중간 정도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 순임금(Netto- einkommen)²⁾의 절반 수준이었다.

2) 역주 - 순임금은 한 근로자가 받는 전체임금에서 사회보장비, 의료보험, 세금, 연금 등을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함.

또 당시 이미 몇몇 고급 생필품 및 공업제품은 인상된 가격으로 또는 “경화(硬貨)의 외환”을 받고 판매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 생필품 가격과 임대료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준의 연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일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것은 몇몇 기본 제품을 제외한 여러 생필품(남쪽에서 들어오는 과일, 고품 치즈, 초코렛, 커피, 조미료, 현대적인 레디 메이드 음식, 고급 주류등)과 일련의 패션 제품, 고부가 가치의 기술 제품들(고급 의류와 신발, 가전 제품), 그리고 또 해외 여행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 유치원 시설의 수용 능력은 크게 늘어났으며 그 수요가 대체적으로 충족이 된 반면, 고연령층을 위한 여가 시설이나 양로원등의 공급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아주 부족한 상태였다.

동독에서는 이외에도 또한 장애자 계층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투자재 및 수입을 위한 외환이 부족하여 장애자를 위한 휠체어나 기타 수입 기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애자 수용을 위한 건축 시설의 부족, 장애자를 위한 전문 치료 시설의 부족도 당시 동독의 장애자 계층이 불이익을 보였음을 보여준다.

5. 민간 기업 활동의 폐지 및 경제구조의 중앙집중화

동독의 계획경제의 주요 doktrin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소유 관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해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의 발전을 막고 결국에는 이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50년대에는 1차적으로 반(半)국영의 성격을 띠는 기업들이 설립되었고, 마침내 1972년까지 모든 “잔존” 민간 기업 및 반(半)국영기업이 완전한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민간기업의 추방 과정은 민간 수공업부문에 확대되었다. 민간수공업 부문에서의 이 작업은 우선은 특히 이른바 생산조합(PGH)의 결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개인 수공업체의 재산이 조합 참여의 형태로 그와 같은 생산조합(PGH)의 재산에 편입되었다. 전체 수공업 생산중 민간 수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8년에는 약 60%까지 낮아졌다. 또 1972년에는 대단위 조합들이 인민공유 기업(VEB)으로 전환됨으로써 무려 1700여개의 수공업 생산조합(PGH)이 국유화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 결과 민간 창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기업간의 경쟁, 즉 현대의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들이 폐지되었다.

민간 경제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의 추방 작업 및 폐지 작업은 중앙집권적인 국영 콤비나트들의 형성 작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중앙집중식 권력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고려, 기업적인 이해 관계나 경쟁의 평가 작업은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 나고, 오히려 콤비나트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동독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SED)이 자주경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콤비나트의 주형태는 같은 류의 생산업체들을 수평적으로 병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순수하게 조직적으로만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지역의 콤비나트를 형성할 때에는 아주 여러 “잔존 업체들”이 “단일한 지도”하에 병합되었다.

이같은 결합이 많은 기형(畸形)의 경제는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콤비나트 소유의 건축 부문, 연구시설, 프로젝트 시설, 그리고 동독 자체의 공급 능력 및 소비재 생산능력을 경제적인 활용도나 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병합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6. 능률저해적 임금 제도 및 왜곡된 가격 구조

동독의 임금은 점점 더 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상실했고 본질적으로 사회정책적인 기능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성과지향적인 임금 구조를 형성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계획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들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여러 지역에서 도입된 이른바 “생산적 임금”은 점점 일상적인, 그러면서도 타당성이 있는 불만의 대상이 되었으며, 작업능률을 제고해주는 자극제의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엄격하지 못한 노동기준”의 경향 존속
- 거의 변동이 없는 평등한 급료지불로 인해 작업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 저하
- 1988년 기준으로 보면 동독 대학졸업자가 받는 총임금(Bruttolohn)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는 35%, 마이스터 봉급보다는 21% 많았을 뿐임. 이에 비해 구서독의 경우 대학 졸업자의 총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봉급보다는 50%, 마이스터의 평균 봉급보다는 42% 더 많은 상태였음.

또한 동독에서는 단일한 세금징수가 실시되지 않아 순임금(Nettolohn)면에서 보면 평준화정도는 훨씬 강하게 이루어져 있었음.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마이스터의 순임금은 평균 8% 더 많이, 대학졸업자의 순임금은 15% 더 높았지만, 기술·경제부문의 대학미졸업 전문인력들의 순임금은 30% 낮은 상태였음.

- 생산단위의 지도적인 수장들에게 이른바 성과에 기초한 봉급을 지불한다는 것은 단지 개별적인 경우에만(예를 들면 수출계획의 달성) 실시 가능한 것이었음.

가격 결정 정책은 동독경제의 능률저하에 근본적으로 기여했다. 사회정책적으로 결정되고 국가의 대폭 지원을 받은 생필품가격은 물론 기업간에 통용된 가격도 상품의 잉여 또는 희소성을 기초로 한 시장 가격이 아니었

다.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내려진 가격 결정은 특히 상조적인 혁신 및 지속적인 상품의 개선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7. 노후한 자본스톡 및 불충분한 구조 개혁

동독에서는 국민소득의 국내 소비중 투자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 든 결과 이미 오래 전에 현대화되고 개선되어야 했을 아주 노후한 자본스톡 - 특히 설비부문에 있어 - 를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후한 산업 시설을 새로운 산업 시설로 전환하는 비율은 연간 1%에 불과했다. 1980년 기준으로 보면 동독 산업 설비중 55%는 10년 이상 낡은 것이었고, 21%는 20년 이상 오래된 것이었다. 비교를 위해 1989년 서독의 산업 설비를 보면 70%가 10년 이하의 것이었고, 이중 약 40%는 5년 이하의 것이었다.

많은 작업장들의 경우 기존의 기계나 시설의 효율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시설 및 높은 대체수요는 많은 동독 기업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다.

동독은 기술을 기초로 현대화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결과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는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제품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선진 공업국들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동독은 서방으로부터 시설을 수입하여 생산의 반을 부분적으로 현대화하고자 시도했으나 외화 부족으로 실패했다.

산업분야에 공급되는 투자재원은 70년대와 80년대에는 주로 자본소모가 큰 기초재 산업, 특히 석탄 생산과 에너지 생산, 그리고 화학 산업 및 금속 산업에 투입되었다. 그중에서도 동독에서는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 원자력 발전소의 설립
- 고도의 석유 분해 시설
- 갈탄과 지하가스에 의한 연료유의 대체
- 금속가공 산업
- 화학제품의 생산 증대

이같은 산업정책은 자체의 부족한 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입 원료를 단기간에 가공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었다. 동독은 이로써 원료의 수입 의존성을 줄이고 구 코메콘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재판매함으로써 경화(외환)의 수입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기초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투자재를 재분배하는 산업정책은 노후한 산업 구조를 고착시키고 잠재성이 있는 산업 부문(예를 들면 기계산업, 전자산업과 같은)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투자 재원을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 한편 이 부문들에 대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로 정밀전자나 로봇산업과 같은 특수 산업부문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 산업부문의 생산물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었다.

8. 심각한 환경 훼손 및 환경 오염

동독의 계획경제체제가 남겨 놓은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해가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한 환경 훼손이다. 지난 수십년간 환경이라는 사회 간접자본을 소홀히 다루었고, 또 현재도 지속적으로 소모한 결과, 환경보호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었다. 그러나 동독은 경제의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의 능률 저하로 인해 오염 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점점 힘들었다. 그 결과 환경과 자연의 무자비한 착취는 물론 특히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피해를 입고 위협을 받는 악순환이 생겨났다.

구동독의 자연 환경이 파멸적인 정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통일 전에도 더 이상 국가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다. 1990년 3월 당시 동독의 자연 보호, 환경 보호, 수리 경제 담당 부처가 제출한 환경정책 발전에 관한 구상은 당시의 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동독의 환경 조건은 대기, 수질 및 토지가 유해물질로 인해 극도로 오염된 상태이다. 이같은 오염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이며, 민족적·전지구적 자연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단기적인 계획 달성이라는 사고방식은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필요한 구조 조정과 투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로 인해 보다 자원절약적인 새로운 생산 라인과 유해물질의 방출을 줄이는 생산 공정에 재반영되어 나타나는, 이른바 자본 스톡스를 개선하는 작업과 관련된 “환경수익(Umweltrendite)”이 생겨나지 않았다.

동독은 체제에 얽매어 자급 자족적인 경제를 고수한 결과 국제 분업에서 고립되었으며, 상품 교환과 경험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보한 환경 기술에 접할 수 없었다. 동독의 에스펜하인(Espenhain)에 소재한 갈탄 건류(乾溜)시설이나 만스펠드(Mansfeld) 소재 구리 공장과 같이 이미 전쟁 이전에 라이프찌히/할레 지역에 자급자족 경제의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난 탄화 화학(Carbo-Chemie)의 대형 시설물들은 자연과 인간편에서 대대적인 환경오염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가격수준보다 훨씬 높은 생산코스트를 요구했다.

조정기능을 하는 시장 가격으로부터 이탈한 부작용은 특히 에너지 부문, 즉 가격에 의한 동기부여가 없을 경우 상당한 환경 훼손을 감수하면서 자원을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산업부문인 에너지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부문의 생산라인에 이용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에너지 수요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다. 민간부문은 규제 시설이나 방열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데다 특히 주민들

은 거의 무료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낭비되었다.

노후한 기술로 인해 극도로 높았던 동독의 에너지 수요는 또한 유향을 많이 함유한 갈탄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기 오염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절대적인 수치로 계산하면 동독에서는 매년 3-4%의 유향을 함유한 3억 2천만톤의 갈탄이 사용되었고, 황산과 먼지를 재정화하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연간 500-600만톤의 황산(구서독: 100만톤)과 220만톤의 먼지가 방출되었다. 이로써 동독은 1인당 황산 대기오염에 있어 세계 수위를 차지했다.

주민수에 비추어 계산해 보면 동독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독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연간 약 22톤으로 서독의 2배였으며, 국내총생산(GDP)의 단위로 환산할 경우 동독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서독의 3.5배나 되었다.

갈탄 채광으로 인해 풍광과 자연에 남겨진 눈에 보이는 거대한 상처들을 보노라면 동독의 자연과 환경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착취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알수있다.

화학부문의 환경 오염을 포함하여 이같은 동독의 환경오염을 제거하는데는 그 심각한 오염정도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9.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및 주택 정책의 실패

동독은 만성적인 외환 부족과 직접적인 생산을 제외한 부문,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이는 재차 전체 경제의 비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 중요한 교통수단인 제국 철도(Reichsbahn)의 선로 확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88년 동독의 철도는 총 연장 1700 킬로미터에 달했는데, 그중 서행구간이 1180개나 되었다. 3660개의 교량은 부담능력이 감소했고, 224개 교량에서는 차량들이 속도를 낮추어야 했다. 지상 건조물의 수리 수요는 지난 80년대에 70% 정도만 충족되었을 뿐이다.
- 도로망도 확충해야 할 기준에 아주 미달한 상태였으며, 구조물의 훼손이 심한 상태였다. 길이로 보면 58%의 도로망의 보루들이 완전히 무너져내릴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게다가 도심도로 및 지방도로는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3만개에 이르는 교량중 10%는 새로 건설되어야 했고, 30%는 완전히 개축 내지 보수가 필요했다.
- 80년대 말 전화망은 지역간 중개기술의 70%가 30년 이상, 거의 100%가 20년 이상 낡았을 정도로 완전히 마모된 상태였다. 주민 100인당 전화보유대수가 11대로 동독은 주민당 전화보유수에 있어 세계 65번째였다.

경제발전에 있어 기존의 환경 오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부문에 있어 환경 사회 간접 시설의 부재 내지는 황폐화였다. 동독은 수질 정화 시설을 대체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시설들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 시스템은 대부분 결함 투성이거나 작동불능이었고, 쓰레기 처리시설은 미비된 상태였다.

산업 폐수의 95%가 처리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된 채로 방출되어 폐수 그대로 흘러갔다. 주민들의 36%만이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거나 기타 정수처리를 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구서독 : 90%).

3만6천 킬로에 이르는 공공 하수도 중 60%-70%는 구조물에 손상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긴급히 정화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공공 상수도 부문에서는 주민 50%이상이 마시는 물이 여러 수처에 있어 식수 기준치를 넘어서 있었다.

쓰레기 처리 경제는 완전히 새로 조직되어야 했다. 통일될 당시 동독에는 11,000개의 무질서한 쓰레기 저장소가 있었다.

도시 지역의 가스 공급관은 2/3가 60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다.

불충분한 투자는 많은 사회간접시설 부문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켰다. 이는 특히 건강시설, 사회시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교육, 문화, 스포츠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80년대 후반에 이 부문의 수리를 위한 건설 수요는 30%-70%만이 충족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열악한 사회간접시설들은 번번히 이런 저런 대형 신축물에 의해 은폐되어졌다.

동독의 주택건설 정책은 일면적으로 도시 주변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집중되었던 반면, 특히 도심 지역의 기존 건물과 여러 도시의 역사적 유물들은 황폐화 되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동독에서는 180만호의 주택이 신축되었다. 또 다양한 차원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동 기간 중 23만 호의 주택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전체 주택보유고는 동기간중 1백만호가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는 신축주택중 90만호는 무너져 내리거나 헐려버린 주택을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주거공간의 확보는 신축 주택의 절반에 불과했다.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는 노후한 주택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강화되었지만, 필요한 수준의 주택 보수작업 - 특히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독은 주택 신축에 그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질적인 면에서 여러가지가 부족한 상태였다. 1989년 주택의 24%는 실내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18%는 욕실이나 샤워실이 없었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독의 주택들은 서독의 주택과 비교해 볼때 질적인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 크기나 1인당 거주면적 면에서 서독 수준에 훨씬 뒤떨

어졌다.

10. 1990년 당시 동서독간의 상이한 상황

이상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전체적으로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간의 경제적인 출발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컸었던가를 말해 준다.

성장 조건과 고용 조건의 개선, 그리고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던 서독의 시장 경제 정책은 - 임금협상 당사자들간의 조화로운 임금정책 외에도 - 지난 1982년 이래 지속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와, 서독 경제는 결국 통일 당시에는 이 성장의 시기를 회고해보는 위치에 있었다.

서독의 국민경제는 이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능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동독의 국영경제는 통합을 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동독 정치국의 고위인사들의 말을 빌면 이미 1989년 가을 지불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이 심한 격차가 있는 두 국민경제가 만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일과 더불어 동독 국영경제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이 서서히 드러났다. 동독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상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동독 내부의 세부적인 사정을 점차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했지만 서독의 시장 경제와의 부딪히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결과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그리고 개별적인 과시물에 의해 은폐되었던 바 동독의 경제적·환경적 위기는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포괄적이고 심한 정도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왜 동독의 구조조정과정이 통일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 비용이 많이 드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II.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

1. 인간을 위한 대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은 지난 40여년간 폐쇄와 고립속에서 살아온 동독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변혁을 초래하는 사건이었다.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이 요청한 시장경제를 맞아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동독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독재하에서 그리고 너무 신속하게 진행된 통합 과정속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해 가는 의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일하는 만큼 내일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주의 통일당의 구호는 동독의 관료들이 원래 실적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동독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정반대의 사실을 경험해야 했다. 즉 동독에서는 별로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이 - 즉 당의 관료들 및 국가나 작업장의 관료들 - 종종 값비싼 특권을 향유했는데, 이는 자기가 맡은 “일”에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게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능률적인 작업방식을 성공적으로 지지해 나가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바로 작업 과정의 합리화라는 영역에 있어 특히 엔지니어들과 전문 경영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충분한 보상은 받는 것은 고사하고 별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했다. 이 그룹의 직업인들은 이미 80년대 초에 동독 경제관료들의 무능에 체념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론 공공 생활과 사적인 영역을 비교해 보면 동독 주민들의 성취 욕구가 결코 쇠퇴한 것은 아니었다. 즉 넓은 공장 건물, 노후한 기술, 지지분한 도로들과 도시들, 퇴락한 집건물들에 대해 잘 가꾸어진 집 내부, 극도로 세심하게 관리된 별장들, 공들여 잘 보존한 자동차들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들이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작업장 기계와 설비들을 마련하는 일은 다른 작업장의 반대 급부(예를 들면 작업공구들을 승용차 또는 화물차와 교

환 거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외에도 고수준의 국가 지원으로 인해 사료보다는 빵과 식료품을 동물 먹이로 먹이는 것이 유리했다. 또 - 인터숍(Intershop)의 발달과 더불어 - 수요가 아주 큰 상품들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독의 마르크화(DM)가 제 2의 통화로서 점점 더 위력을 발휘했다.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계획경제체제의 취약한 부분들을 착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핍 현상과 공급 부족에 대해 “계획의 외부에서 민간 주도로” 대응하는 지하경제가 발달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체제 전환 이후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던 사회에 편입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동독 주민들이 체험한 바는 광고 텔레비전이나 인터숍을 통해 알게 된 소비사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이란 것이 동독업체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많은 이들에게는 우선은 조업 단축 및 실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경우 시장경제적인 여건하에서 자신의 성취욕 및 성취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불가능했다.

물론 당초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많은 알력들을 가져다 줄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은 적응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있을 것이라는 점을 통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동독지역에 포괄적으로 투입한 사회적 조치 및 노동정책적인 수단들의 목적은 주민들로 하여금 바로 이같은 어려움들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바로 각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책임하에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개인이 소비자이건 노동자이건 또는 투자가이든 기업가이건 이는 변함없는 원칙이다. 수십년간 후견인과 같은 국가의 배려와 조종속에 살아 온 사람들로서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사고를 전환한다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든 작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동독주민들은 시장경제가 각 개인에게

부여해주는 기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붙잡아왔다.

동독 주민들의 성실성, 능력 그리고 성취 의지는 특히 새로 설립된 업체들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에서는 가장 현대적인 생산 기술의 도움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동독의 경제적인 부흥 및 주민들의 소비 욕구를 감안하면 아주 많은 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공되어지는 일자리는 현재 아주 적은 상태에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같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주의가 남겨 놓은 유산에 좌우되는 것이지, 1990년 7월 1일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동독에 도입된 시장경제 체제에 달린 것은 아니다. 물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동독의 경제적인 능률과는 상관없이 임금을 서독 수준으로 실질 조정하고자 하는 임금 정책이 동독지역의 고용상황을 현저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독일 연방정부는 1989년-1990년 체제 전환기를 맞아 급속히 악화되는 동독의 경제 사정과 이주자들이 급증 사태를 맞아 1990년 2월 13일자로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제안했다. 협상은 대담하게 진행되어 이미 1990년 5월 18일 국가조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적 중앙 통제 경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2.1. 화폐통합

2.1.1. 통화정책적인 협력의 시작 : 여행 외환 기금

독일 통일 과정에는 화폐, 경제 및 사회의 통합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회폐정책상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1989년 콜 수상이 제안한 “10개항 통일 방안”은 여행 외환 기금(Reisedevisenfonds)이라는 형태의 최초의 구체적인 통화정책적 지원을 위한 단초를 담고 있었다. 이 기금은 동독 주민들에게

당시 상황으로서는 비교적 유리한 환율로 태환가능한 통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장기간 돈없이 서방 지역을 여행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이 여행 외환 기금에서 200 마르크(DM) 수준의 지불 수단을 얻을 수 있었는데, 100 마르크는 1:1로, 그리고 나머지 100 마르크는 1:5로 교환이 가능했다(1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는 각 금액의 절반). 200 마르크 전체를 교환할 경우에는 1:3의 교환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 주민들이 볼 때 7:1 내지 10:1의 당시 시장 환율에 비하면 아주 유리한 교환율이었다.

이 기금의 전체 규모는 29억 마르크였으며, 동독 정부가 7억 5천만 마르크 그리고 서독 정부가 21억 5천만 마르크를 부담했다. 이 기금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동독 마르크화는 소위 보상 기금(Gegenwertfonds)으로 전환되어, 동독 정부와 공동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했다.

거의 1500만에 이르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 마르크화(DM)를 얻기 위해 이 여행 외환 기금을 이용했다. 50억 2600만 동독 마르크가 21억 6600만 마르크의 서독 마르크화로 교환되었는데, 14억 5100만 동독 마르크는 1:1의 교환율로 그리고 35억 7500만 동독 마르크는 5:1의 비율로 교환이 이루어졌다. 보상 기금으로 재유입된 재원은 주로 동독 지역에서 이 목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들에 지출되었다. 1990년 7월 1일 통화 전환이 실시될 때까지 지출되지 않은 소량의 돈은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어 연방재정에 편입되었다.

여행 외환 기금은 양 독일 국가간의 통화정책상의 협력에 있어 중요한 일보를 딛는 것이었다. 이 기금으로 인해 양 지역 주민들의 상호접촉이 용이해졌고, 이는 통일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2.1.2. 단계적 해결 방안 대신 신속한 마르크(DM)화 도입

1990년대 초에는 양 독일 국가간의 통화정책상의 협력에 있어 또 다른 일련의 조치들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우선은 단계적인 화폐통합의 모델을 마련했다. 이 단계적인 화폐통합 계획은 동독의 경제질서를 점차적으로 시장경제적인 여건으로 조정할 다음 그 마지막 단계로 단일 통화를 창출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상이한 단계적 화폐통합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제안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대체로 일치했다. 이 통합모델의 장점은 그 자체가 논리적인 완벽성을 지니고 있고 경제적인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이미 1990년 1월 말 단계적인 협력을 통해 이 두 지역의 국민경제를 서서히 접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급속히 진행된 동독의 해체 과정은 신속한 행동을 요구했다. 게다가 또한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은, 단계적인 통합 방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비 된 동독의 경제가 우선은 체제전환의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가운데 많은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더욱 힘들고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은 서독의 마르크(DM)화를 동독에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었다. 동독 주민들도 명백히 서독 마르크화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급속히 악화된 동독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양 독일 국가간의 화폐를 통합하는 일이었다.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으로 독일 통일의 실현을 위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1990년 2월 7일 연방내각은 지체없이 동독과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을 결의했다.

2.1.3. 교환율의 문제

그 다음 몇주간 양 독일의 대표자들은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었다. 전문가

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논의의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 것은 교환율의 문제였는데, 이를 결정하는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했다.

교환율의 문제는 우선은 이른바 현금 잔고의 규모와 관계있는 것이었다. 이 잔고의 규모는 은행이 기업, 주택건축, 그리고 국가부문에 제공한 신용(자산부)과 개인 및 기업의 은행자산(부채부)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은행 차변(Aktiva)과 대변(Passiva)을 전환하는 것은 서독 마르크화의 통화량 증가를 초래하며,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 서독 마르크화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독 마르크(DM)화의 총 통화 증가량은 기대되는 동독의 잠재 생산력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1990년초 이후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 동독 경제의 생산 잠재력은 서독 경제의 생산 잠재력의 약 10-11% 수준이었다. 이로서 이미 중요한 수치가 주어졌다. 따라서 동독의 제안대로 개인의 저축이나 유통 현금을 1:1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서독지역의 통화량 M3(비은행 보유의 통화고를 말하는 것으로 유통 현금, 국내의 비은행들이 독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요구불 예금, 4년 지불 기한 이하의 적금 및 법적인 해약기간을 가진 저축액등이 이에 해당함)는 1990년 초 약 1조 2천억 마르크였다. 1:1로의 교환은 이 통화량이 2천 5백억 마르크, 즉 21% 증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통화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준의 두배나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현금잔고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교환율인 2:1을 적용하는 방안만이 고려되었다. 이외에도 교환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인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처음부터 1:1의 교환율은 저축액에 한정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다.

잔고 현금의 교환보다 더 어려운 것은 유동 현금, 즉 임금, 봉급, 임대료, 연금등의 교환이었다. 임금을 새로운 통화로 환산하는데는 무엇보다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을 감안해야 했다. 왜냐하면 동독 기업의 경쟁력을 우선적

으로 결정하는 것은 임금 수준 및 임금인상 추이, 임금 코스트, 그리고 이자 부담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임금 수준을 동독의 생산성에 상응하여 결정하는 것이었다.

동독 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토대로 보면 당시 동독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편차가 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서독 기업들의 1/3 수준을 유지했었다. 따라서 동독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코스트 내지 총임금이 서독의 1/3 정도여야 했다. 많은 상품에 대해 예상되는 국가지원의 철폐에 따른 물가상승율과 늘어나게 될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안하면 약 2:1의 교환율이 동서독 간의 생산성 격차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1 보다 훨씬 낮은 교환율은 물론 임금생활자들에게 큰 타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1988년 서독의 평균 임금은 3,850 마르크(DM), 동독의 평균 임금은 1,270 동독 마르크였다. 2:1의 교환율을 적용할 경우 동독의 평균임금은 635 서독 마르크(DM)에 불과했다. 동독 지역에서의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실질 임금은 사회 부조금(Sozialhilfe) 수준을 밑도는 것이었다. 따라서 2:1의 교환율은 동독에서의 서독으로의 이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며, 동독에 대한 사회보장비의 지출의 대폭적인 증가를 초래했을 것이다.

서독 정부는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까지 참여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1990년 4월 22일과 23일 경제 및 사회공동체, 화폐통합을 위한 대 동독 협약에 관한 기본 제안을 의결했다.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과 봉급은 원칙적으로 당시 상황의 1:1 수준으로, 다시 말해 동독 내 국가지원금의 철폐나 가격개혁에 대한 보상없이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향후 임금정책은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 있었다.

- 동독의 연금제도는 서독의 연금제도를 따른다. 즉 45년 보험가입 기간 중 평균 순임금의 70%로 한다.
- 동독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신용 잔고는 원칙적으로 2:1로 전환한다. 그러나 1인당 4천 동독 마르크까지는 1:1의 교환율로 교환이 가능하다.
- 비동독 거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정에 합의하되, 이 규정은 무엇보다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는 3:1의 교환율을 갖도록 한다.

그러나 화폐교환의 세부 내용들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들은 동독 정부와 협의가 있는 후에 내려져야 할 사안들이었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관한 동서독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의는 1990년 4월 27일 이루어졌다. 양 독일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미 1990년 5월 2일 전문위원회에서 화폐교환 방식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독 정부는 1:1의 우대 교환율이 적용되는 금액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화폐교환을 통해 이들이 일생동안 수고한 노동의 댓가를 가능한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바로 수십년간의 계획경제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연령과 무관하게 책정되는 4천 동독 마르크라는 상한 금액대신에 은행구좌 소유자의 연령에 따라 우대교환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독 정부는 이같은 제안의 변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 차등교환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서독 마르크(DM)의 통화량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통일조약(統一條約, 제25조)에서는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의 창출에 관

한 조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저축가들에게 대해 명목상으로 줄어든 저축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지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우선 인민 소유 재산의 스톡을 받아 들여, 그 수익성을 확인하고, 이 재산을 우선적으로 경제 구조조정과 국가의 재정정비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탁관리청의 재산 상태가 부채상태에 놓이고 이것이 앞으로 연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예상되자, 독일 연방하원의 재정위원회는 1992년 4월 30일자 권고안과 보고서에서 구 인민소유 재산에 대한 지분권은 배분할 가능성이 없거나 이를 대체하는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1992년 이 문제를 다루었던 독일 연방하원의 청원위원회도 증서로 준 저축가들에 대한 지분권에 대해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같은 견해는 독일 정부에 의해 표명된다(인쇄물 12/4524).

2.1.4. 화폐 교환 차액보전기금, 채무청산기금, 구채무변제기금

화폐 교환에 있어 교환율을 확정하는 문제는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Ausgleichsfonds Währungsumstellung)을 통해 동독의 금융기관들에게 차액보전 청구권을 분배하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은행 차변과 은행 대변의 일부에 대해 상이한 교환율을 적용함으로써 은행의 대차대조가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였다. 차변 금액이 대변 금액보다 적은 은행은 생존이 불가능해졌으며, 그렇게 될 경우 동독지역에 효율적인 은행 제도를 확충하는 작업은 어렵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하에서 즉시 투입이 가능하고 동독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금융기관망을 갖춘 은행 기구의 존재는 신용재원의 마련과 동독 지역의 시장경제 부흥프로그램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였고, 또 이 사실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은행 차변의 평가 절하된 부분, 즉 은행 돈을 빌려간 고객들에 대한 은행측의 줄어든 청구권에 대해, 그리고 또한 가격 결제와 기타 은행 대차 대조의 수정분 보전을 위해 표준가격의 조정 항목을 설정해야 했다.

이같은 차액보전은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에 대한 유이자의 청구권의 설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차액보전청구권의 할당은 금융기관들이 수지의 조정외에도 채권자 보호와 경쟁의 이유에서 적어도 결산 총액의 4% 이상인 자기 자본을 확충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화폐 교환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유이자의 차액보전 의무가 부과되어진다.

1992년 말까지 동독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약 650억 마르크 규모의 차액보전 청구권이 분배되었는데, 이같은 청구권의 분배가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다.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은 보전청구권이 보전의무를 초과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른바 순수 결손액의 수준에서 동독의 국가재정 대신에 등장한 채무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이같은 청구권의 규모는 현재 총 1,10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차액보전 청구권 이외에 채무청산기금이 넘겨 받는 것으로는 1) 1990년 10월 3일자틀 기준으로 280억 DM에 이르는 동독의 국가 부채, 2) 통일 조약 제23조 제7항에 따라 국립 베를린 은행에 대한 보증 책임에서 생겨나는 연방의 의무(아직은 아무런 부담이 생겨나고 있지 않음) 그리고 3) 통일조약에 의거 대외 무역의 독점 및 외환 독점의 범주에서 또는 기타 동독이라는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는 2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서독 및 외국에 대한 청구권과 부채의 청산 비용 등이 있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과 통일 조약에 따르면, 채무청산기금으로 총괄되는 동독의 부채는 향후 신탁청 재산의 매각으로 생겨나는 수익금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을 경우 신탁청으로 이를 이전시키기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부채는 연방과 동독의 주들이 반분해서 분담하기로 되어 있

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실현이 불가능했는데, 이는 그 구상에 따라 채무청산기금과 신탁청 부채의 절반을 분담하는 것이 동독 주들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재정진실화 방안의 시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 예산규정 § 26 에 의한 법적 능력이 없는 특별 재산이라는 구채무변제기금법에 의거 1995년부터 '구채무변제기금'(Erblastentilgungsfonds)을 신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이 '구채무변제기금'에는 1994년 말까지 구체화될 동독의 모든 재정적 유산에서 생겨나는 부채들이 총망라되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1994년 말까지 일년간 더 연장되는 채무청산기금의 부채(총 1,400억 마르크)와 약 2,300억 마르크로 추정되는 신탁청 부채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구채무변제기금'의 재원 마련을 통해 현재 총 4,00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를 가능한 한 세대내에 청산하고, 이로써 동독 사회주의의 재정적인 유산들에 대한 재원 문제를 가능한 한 단기간내에 종결하게 되어 있다.

2.1.5. 동독 화폐 제도와 은행 제도의 구조 변경

화폐 통합의 협상 과정에서는 교환 방식이 공공의 주된 관심사였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창출을 위한 조약은 이를 넘어서 동독 금융 부문에 관한 다수의 규정들을 담고 있다.

2.1.5.1. 동독의 화폐 제도 및 은행 제도

동독의 은행 제도를 전환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였다. 화폐 통합에 관한 조약에는 이와 관련해서 "민간 은행, 동업조합 형태의 은행, 공공 은행의 경쟁하에" 시장 경제적인 금융제도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1990년 5월 18일 국가 조약, 제10조).

장벽붕괴 이전까지는 동독의 화폐 제도 및 은행 제도는 엄격히 계획경제적인 관점을 따른 것이었다. 서독에서와 같은 두 단계의 중앙 은행 제도 - 즉 중앙은행인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과 상업 은행(시중 은행) -가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 제도의 주된 기능을 한 것은 동독 국립은행(Staatsbank)이었고, 이 은행은 중앙 은행과 시중 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이 국립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통화량의 계획과 통제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또한 동시에 이 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으로서 산업체, 건축 부문, 내독 교역, 교통, 우편, 통신분야도 담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은행은 동독 주민들에 대한 여행 경비의 판매도 담당했다.

그러나 동독의 은행 제도에서 그 수적인 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은 '저축 은행(Sparkasse)'들이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 물론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지만 - 민간인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중 은행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은행들은 특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임무를 위한 은행들이었다. 이 점에 있어 동독의 시중 은행 제도는 서독의 금융기관들과 큰 차이를 지닌다. 서독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들과 저축 은행들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상품을 선보이며 경쟁 관계에 있지만, 동독의 금융기관들은 특정한 범주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경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은행 서비스는 주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 금전의 위탁과 신용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다.

2.1.5.2. 서독 중앙 은행 제도의 도입

화폐 통합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그 가치가 충분히 입증된 서독의 중앙 은행 제도를 확장된 새로운 통화 지역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통화정책적인 수단을 투입할 경우에 있어 독일 연방은행(분데스뱅크)의 독립성, 그리고 통화의 안정이라는 동 은행의 금융정책의 최고 목적은 확대된 통화지역에 있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국가 조약과 더불어 독일 연방 은행의 금융 정책상의 책임과 서독의 중앙 은행 제도가 동독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독일 연방은행은 동독 지역에서의 그 권한 행사를 위해 동독 전지역에 15개 지점과 베를린에 1개의 관리소를 설치했다.

1990년 8월 31일자의 통일 조약은 마침내 연방은행법을 동독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 연방은행법의 확대 적용과 더불어 독일 연방 은행의 조직은 동등한 대우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기초를 가져야 하고, 임시관리소의 설립을 포함 1990년 5월 18일자의 국가 조약에 의거한 잠정적인 규정들은 지속적인 규정들에 의해 대체되어야 했다.

1992년 10월 22일 독일 연방은행법을 새로 정비하면서 이같은 요구들은 새롭게 반영되었다. 이 독일 연방은행법의 개정과 더불어 몇가지 기술적인 내용의 수정외에도 이제까지 9개의 주 중앙은행을 이제는 동독 지역을 포함하여 11개의 주요관리소로 병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동독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독일 중앙은행의 조직에 편입되었다.

2.1.5.3. 동독 시중은행 분야의 구조 변경

동독 시중은행의 구조 변경도 그동안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동독 국영은행으로부터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들이 분리되어, 1990년 4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독일 신용은행(DKB)과 베를린 시립 은행(BSB)으로 이관되었다.

동독 지역에 시장경제적인 은행 제도를 확충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통해 진척이 이루어졌다:

- 서독 은행들의 조기 참여(지점 설치, 저축 은행과 동업 조합 은행에 대한 자문 제공)

- 적절한 자기자본 형성지원과 손실 보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화폐 교환차액보전기금을 통한 동독 은행에 대한 지원
- 동독 은행들의 재정 지원을 위한 독일 연방 은행의 과도기 규정
- 연방의 보증 책임을 기초로 베를린 국립 은행에 의한 잔존 구은행연합의 합병 보장.

이제는 “베를린 국립은행”으로 전환된 과거 동독 국립은행은 현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청산 작업의 범주에서 모든 통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이 은행은 나아가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창출에 관한 국가 조약의 과제들을 수행할 의무를 부여 받고 있다. 이는 화폐교환 차액보전기금의 운영 및 이와 관련 동 은행에 이양된 과제들, 그리고 화폐 교환 시까지 동독의 국립 은행과 앞에서 언급한 바 이 국립 은행에서 생겨난 두 개의 은행(독일 신용은행과 베를린 시립은행)간에 발생한 투자 관계 및 재정지원관계의 관리와 청산 작업을 수행한다.

독일 신용은행(DKB)은 현재 ‘정(플러스)의 청산 은행’으로 그 정관에 의거 투자 업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은행은 주로 상공업 부문의 인민 소유 기업들과 주택 건설 부문의 지방자치기업 및 동업 조합기업들에게 1990년 6월 30일까지 보장해 준 신용들을 관리하고 있다(구 신용).

동독의 저축 은행(Sparkasse)들도 국립 은행에서 분리되었다. 이 저축은행들은 그간 신설된 동독 저축은행 협회, 독일 저축은행 및 지로(Giro) 협회 및 독일 지역 저축은행 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 속에 서독 저축 은행의 모델을 따르는 구조 변경을 실시했다. 동업조합 은행과 기타 동독의 은행들도 그동안 서독의 은행들과 유사한 구조를 갖기 위한 기초 작업이 이루어졌다.

2.1.6. 화폐통합에 따른 제 경험

2.1.6.1. 통화량에 미친 영향

화폐 교환과 더불어 통화량 M3는 근본적으로는 안정화 정책에 따라 책정된 좁은 범주안에서 증가를 보였다. 3,000억 동독 마르크에 이르는 동독의 개인 및 영업체들의 은행 예금이 1,820억 서독 마르크로 교환되었으며, 이는 평균 교환율이 1.65:1이었음을 보여 준다.

전체 독일의 통화량 M3는 화폐 교환을 통해 처음에는 약 15% 증가를 보였으며, 이로써 동독의 생산 잠재력의 추정치인 10%-11%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화량이 이같이 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전에는 은행간 거래로 규정되어 통화량의 계산에서 “따로 제외되어 있었던” 대외 무역업체들의 요구불 예금이 이제는 통화량에 산입된데 기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전에는 동독 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저축액을 장기 저축의 형태 - 장기 저축은 통화량의 계산에서 제외됨 - 로 예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독 은행들의 구조 변경은 또한 다양하게 은행에 돈을 예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따라서 여러 저축자들이 이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저축액을 장기적으로 예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적응 과정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같은 동독 주민들의 예금 태도의 변화는 1990년 하반기 동독 지역의 M3가 165억 마르크가 감소한 1,635억 마르크에 이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는 서독 통화량의 1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독일 연방은행은 1991년 초부터 독일 전체 통화지역을 대상으로 금융 통계를 내고 있어 1991년 1월부터는 서독과 동독의 금융 상황에 대한 분리된 수치를 규칙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별 보고서들을 보면 동

독의 통화량은 그간 서독 수준의 약 10% 정도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6.2. 가격 변동

교환 방식 및 동독 지역의 소비 태도와 저축 태도등은 우려했던 바 물가 상승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독 지역에서는 1991년 중반까지 물가 상승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서독의 부흥은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지역으로부터 생겨난 강력한 수요를 통해 기업들의 가격 인상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1991년 여름부터는 인플레이율이 뚜렷한 증가를 보여, 1991년과 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각각 3.5%와 4% 증가했다(90년: 2.7%). 그러나 이같은 물가 상승은 화폐 교환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이전 해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독 마르크(DM)화의 도입 이후 동독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동독 마르크화의 가격 수준에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내려 갔다. 1990년 하반기 생계비 가격 지수는 1989년 수준보다 3% 낮았다. 물론 그 이후 부터는 동독 지역의 인플레이율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동독 지역의 이같은 물가상황의 악화는 동독 지역의 높은 임금 인상, 국가지원의 철폐 그리고 과거에만 해도 비교적 저수준에 고정된 물가들(예를 들면 임대료)의 대폭 인상 등이 주요인이었다.

2.1.6.3.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경제 통합 및 화폐 통합, 그리고 이에 따른 급속한 통일 작업은 1990년 연방의 재정차입에 의한 자원 조달을 대폭 늘어나게 했다. 따라서 1990년 연방의 총 재정차입(만기 자본시장 자원의 부대 자원 조달 + 순 자본시장

청구액)은 1989년에 비해 803억 마르크에서 1,449억 마르크로 늘어났고, 순 자본시장 청구액은 154억 마르크에서 663억 마르크로 늘어났다.

1991년 중에 연방 정부는 한편으로는 긴축적인 지출 정책과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의 증가로 인해 연방의 자본시장 청구액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연방의 총 재정차입액은 1,217억 마르크, 순 자본시장 청구액은 300억 마르크로 줄어들었다.

1990년 연방 재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우연히도 주로 호의적이며 수익성이 좋은 시장과 맞아 떨어졌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상된 자본 수익율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연간 평균 공채 유통 비율은 1989년 7%에서 1990년 8.8%로 증가했음).

다른 요인들 외에도 자본 시장 청구액이 줄어든 것은 연방 정부측에서 보면 금융 정책에 있어 행동 여유가 그만큼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는 1991년 이후 장단기 이자율을 내리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을 형성해 주었다.

2.2. 경제통합

2.2.1 단일한 경제질서의 도입

화폐 통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제 통합은 1990년 7월 1일 같은 시기에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절대적인 법적 기초를 형성했다. 경제 통합은 1990년 10월 3일자로 효력을 갖게 된 통일조약과 더불어 양 독일지역에 단일한 경제 질서가 도입됨을 의미했다.

이미 국가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정되었다:

- 경제통합을 위한 공동의 기초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1조, 3항)
- 동독은 시장의 힘과 민간 주도가 전개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

한다(11조, 2항)

동독은 서독의 모든 중요한 경제 법규를 수용하거나, 또는 이에 이긋나는 동독 법규들은 폐지하고 서독 법규를 도입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모든 시장경제적인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들 - 사적 소유, 효율 경쟁, 자유로운 가격 결정, 계약의 자유, 영업 활동 및 영업 지역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운용 - 이 단번에 동독지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위한 근본 원칙이 되었다. 국가 조약의 한 부분인 이른바 “주요 원칙 기록(Leitsätzeprotokoll)”이 이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 프로토콜은 무엇보다 경제 통합을 위한 다음의 중요한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다:

- 경제적인 성과가 주로 민간 경제와 경쟁에 의해 발휘되어야 한다.
-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다.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는 가능한 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 기업의 결정은 계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예를 들면 기업의 생산, 구매, 공급, 투자, 노동 관계, 가격, 수익의 사용 등)
- 민간 기업과 자유업(Freie Berufe)은 국영 기업이나 조합 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 불가피한 전체 경제적 이유로 가격을 국가가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격 결정은 자유로워야 한다.
- 경제 활동을 위해 영업 활동, 토지나 기타 생산 수단의 취득 및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하에 있는 기업들은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국영 기업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쟁력을 갖도록 구조조정하고 또 가능한 한 민간 기업 소유로 이전해야 한다.

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우편 및 통신을 위해서는 연방 체신 구조조정법의 제도 및 질서정책 원칙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2.2.2. 계획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의 혼합 배제

이같은 주요 지침들의 수용과 더불어 계획 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소를 혼합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배제되었다. 만약에 이와는 다른 결정들이 내려졌더라면, 이는 필연적으로 동독의 전환 과정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특히 경쟁을 창출하고 보장하는 작업은 동독지역의 개별적인 경제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질서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동독이 서독의 “경쟁제한 금지법”을 수용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국가 조약 Pkt. II.1의 부록 II). 이것은 또한 국가 조약에서 합의한 바 국가의 대외무역의 독점 폐지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제13조 1항과 제11조 3항에서 동독은 특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대외 교역을 보장하고 자국의 법을 EU의 경제정책적인 목표에 조정할 것을 약속했다.

제기능을 하는 국가내적인 경쟁 내지 국가외적인 경쟁의 보장은 가격 결정의 자유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어야, 그 가격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희소성(稀少性)을 반영해주는 것일 수 있고 그를 통해 자원을 효과적인 방향으로 분배하고 낭비가 일어나지 않게 해 준다. 1990년 5월 18일자 국가 조약은 경제통합을 위한 “주요 원칙 기록”에 이같은 질서정책적인 근본 원칙이 되는 사상들을 확정, 기록함으로써, 이같은 원칙들을 완전히 고려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는 또한 생산 수단과 토지등의 사적 소유와 이용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동독은 국가

조약 제1조 3항에 사적 소유를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정함으로써 이같은 원칙을 근본적으로 인정했다. 이같은 동의는 다음의 평가, 즉 사적 소유를 형성할 수 있으며, 자신의 판단과 목적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전망이 현재 경제의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성취 의욕과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평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서독의 회사법을 전용(轉用)하고 인민 소유의 기업과 콤비나트들을 합자 회사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동독의 기업들은 시장경제적인 거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 형태를 갖게 되었다.

시장경제의 급속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들은 “DM 화 대차대조표법(D-Mark-bilanzgesetz)”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동독은 국가 조약에 따라 이 법을 공포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동독 지역의 회계는 서방 국가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계획경제하에서는 구매코스트 또는 생산코스트가 국가의 가격 책정에 의해 결정되어졌는데, 이같은 계획경제하의 평가 규정들은 기업의 자산상황을 실질적인 상황에 걸맞게 전달해 주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었다. 대차대조를 보면 차변은 과대 평가된 반면, 대변은 과소 평가되었다. “DM 대차대조표법”은 동독 지역의 기업들로 하여금 1990년 7월 1일 자로 DM화 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 목적을 위해 모든 재산상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담은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 작업의 결과 기업 경영가와 출자자, 특히 신탁청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재산상황에 대한 개관을 얻을 수 있고, 채권자와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가능한 위험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DM화 대차대조표법”에 들어 있는 바 채무초과의 폐지, 자본 확충 및 새로운 자본확정에 관한 규정들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동 규정들은 기업들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자기 자본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국가조약은 시장경제의 구성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것 외

에도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본질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2.2.3. 경제통합의 일부로서의 환경 통합

국가조약 제16조는 독일의 환경 통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즉 1990년 7월 1일 발효된 동독의 환경일반법은 이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포괄적이며 예방 원칙에 충실한 서독의 환경법이 동독 지역에 확대되었고, 이로써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었다:

- 경제통합 및 화폐 통합 이후에는 “환경 덤프(Umweltdumping)”의 여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안된다. 따라서 동독 지역의 모든 새로운 시설들은 서독에서와 동일한 엄격한 환경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그러나 동시에 선부담(先負擔) 상황, 시설물의 상태, 그리고 필요한 환경 행정의 완전한 신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고려되어졌다.

이 국가조약과 관련하여 통일조약 제34조는 이외에도 입법자들이 예방 원칙, 원인제공자 원칙 및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기초를 보호하고 적어도 서독에서 이룩한 높은 수준의 생태학적인 삶의 환경 - 특히 생태학적인 정화 프로그램 및 개발 프로그램의 확충 - 을 촉진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2.4. 국가 재정상의 변경 사항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은 또한 국가 재정에도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공공 재정은 서독의 재정법과 제정 구조에 맞게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국가조약 제26조와 부록 IV, III.1). 이 외에도 국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독의 국가 재정 적자를 제한 내지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2.2.5. 법질서, 행정조직 및 사법조직의 전면적 적용

국가조약과 더불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인 프레임은 주어졌지만, 이같은 제도적 프레임이 아직 전반적인 국가 및 민간의 법질서, 그리고 이에 속하는 공동의 행정 및 사법의 조직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곧 드러났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제 및 화폐 통합은 중도에 중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조약과 더불어 전반적인 법질서 및 국가 조직, 행정조직이 동독 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2.2.6. 경제를 위한 보조정책

시장경제하의 구조 정책은 질서정책적인 면에서 종종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간에 곡예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국가조약 제14조에는 모든 위험들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기를 담은, 과도기적으로 동독지역의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형성에 신속히 적응하는것을 용이하게 해줄 조치들을 취할 것을 합의하고있다. 이를 통해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이전에 기초한 국가의 경제정책의 길이 열렸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동독경제를 위한 지원조치는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통합과정을 지속적으로 가속화 함으로써 국가조약에 의해 발효된 경제통합에 또한 물질적인 형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일련의 국가의 지원조치를 통해 동독지역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대하는 경향이 형성되었다.

통일조약 제28조 2항에 따라 경제성장과 구조전환을 촉진하기위해 개별적으로는 특히 지역적인 경제지원의 동독지역으로의 이전, 경제와 밀접한 사회간접시설에 특히 중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중소기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그리고 산업체의 자기책임하에 입안된 구조조정 구상을 기초로 경제의 현대화와 구조적인 전환을 위한 조치들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동독은 이외에도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서독에서 적용되고 있던 연방 차원의 모든 경제 지원 프로그램들과 유럽 공동체(EC) 차원의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보다 조금 늦게 구상된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Aufschwung-Ost)” 전략의 전(前)단계를 형성했던 이 모든 지원 조치들의 우선적인 목적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민간 투자 및 공공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것은 동시에 동서독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점진적으로 평준화해 나가는데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결함들에 그 원인이 있는 체제 전환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같은 문제들은 광범위한 국가 지원 조치들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제 5장 I 참조).

2.3. 사회통합

사회적 시장경제에는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필수적이다. 이는 경제적인 성과와 사회 안정은 상호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경제 활동은 복지와 사회 안정을 위한 물질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사회의 안정은 재차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따라서 1990년 5월 18일의 국가조약은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일체를 이룬다는 점과 동서독 지역의 사회적 수준이 서독의 연방 노동법 및 사회법 질서의 원칙에 의해 단일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간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조약이 발효되었는데 이에 따라 동독의 임금과 연금을 1:1로 서독의 마르크화(DM)로 교환해주는 작업을 통해 체제가 잘 갖추어진 연방 독일의 사회 보장 체제가 동독 지역

에 확대되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같은 목표는 보다 더 잘 성취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상 필요한 과도기 규정들은 후일 대체가 용이하도록 제한되었고, 그 적용시한도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 같은 과도기 규정들의 목적은 특히 동독 지역의 경제 변혁을 사회적으로 충분히 측면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보호책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

2.3.1. 임금협상의 자율성 및 노동쟁의법

이미 국가조약과 더불어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 요소인 노동법의 프레임이 마련되었다. 이는 바로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노동조건과 경제 조건을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단결의 자유를 의미했다. 기존의 동독의 노동법 질서와는 분명하게 결별을 고하면서 동 법규는 임금과 기타 노동 조건이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고용주 단체 및 고용주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확정되도록 규정했다.

서독의 임금협상법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임금협상의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이것은 단일한 경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사회적인 노동 조건을 책임감과 형평성을 갖고 경제발전에 적응하게 하는 정책을 통해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사회계약적인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게 해 주는 조치였다.

2.3.2. 기업 현장 및 기업의 공동 결정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이 가져다 줄 문제들을 근로자의 이해는 물론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독에서의 시장경제적인 구조의 형성이 처음부터 근로자의 기업 경영 참여를 동반하는 것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국가조약은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해 서독의 공동 결정권³⁾을 동독 지역에도 확대·적용할 의무를

3)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이란 근로자가 경영협의회(Betriebs-

지고 있었다.

또한 1972년 제정된 기업헌장⁴⁾의 확대·적용으로 자유롭게 선출된 경영협의회(Betriebsrat)를 통해 포괄적인 지위를 갖는 근로자 대표단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영협의회 제도로 말미암아 당시 동독 지역에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에 따라 등장한 기업 내부의 문제들을 근로자의 이익은 물론 고용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전제가 마련되었다.

2.3.3. 해고 보호 (Kündigungsschutz) 및 노동 보호

계획경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은 당시까지 동독에서 실시되고 있었던 이른바 고용 보장의 실천이라는 과제를 제약했다. 왜냐하면 이 고용 보장이라는 과제는 실제로는 직업의 자유, 직장 선택의 자유 그리고 (고용)계약의 자유와는 합치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해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도입과 더불어 서독의 해고(解雇)보호법이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는 구상과 함께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계약이라는 근거에서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해고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졌는데, 이 과도기 규정들은 그 사이 대부분 기간이 만료되었다.

노동 보호라는 영역에 있어 국가조약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동독 법규를 적절한 과도기를 설정하고 서독의 노동법에 따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규정한 것은, 비록 동독의 많은 규정들이 형식적으로 서독의 규정들에 비견할만하지만 효과적인 노동(rat)형태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함

4) 역주: 기업헌장(Betriebsverfassungsgesetz)이란 민간기업체에서 기업의 사회적 문제, 인사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근로자의 공동 참여 및 공동결정을 규정한 법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전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몇몇 부문, 예를 들면 화학 물질 및 유해 물질 방출에 관한 법과 같은 부문은 서독의 규정들에 비견할만한 법규들이 부재했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노동 보호와 관련해서도 서독의 법규 및 제도가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이로써 전체 독일 지역에 걸쳐 그 효능이 입증된 이중적 노동 보호 체계가 확립되었다.

2.3.4. 세분화된 사회 보장 제도

국가조약은 또한 단일한 체제의 사회 보장을 위한 전단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국가조약에 의거 동독은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으로 세분화되는 사회 보장 및 실업자 보장 제도를 확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해야 할 기관들은 공법적인 성격을 띠는 자치체(自治體)로 국가의 법적인 감독하에만 놓이게 되었다.

국가조약은 또한 사회보장의 재원 조달을 위해 서독의 법을 수용할 것을 규정했는데, 예를 들면 국가 재정에 대해 사회보장 담당 기관들의 재정적 독립성, 서독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장 기여금 정액율에 따라 부과되는 기여금을 통한 대부분의 서비스(보상) 재원의 조달, 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상액을 기초로 한 기여금 책정 기준의 확정, 그리고 기여금 및 보상금의 임금과의 연계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국가조약은 일정한 과도기 후에는 보험 가입 의무자들의 경계 구분도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조약은 이외에도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상해 보험의 보상지불에 있어 과도 기간과 적용 기간을 규정했으며,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실업자 보험에 대한 초기 재정지원조치 (Anschubfinanzierung)를 원칙적으로 자립적인 사회 보장 제도 구축을 위한 지불 능력 보조로 간주했다.

· 이같이 설정된 진로(進路)는 통일조약과 더불어 더욱 공고히 되었다.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 독립적인 사회 보장 기관들에 의해 의료 보험, 연금 보험 및 상해 보험이 도입되었다. 물론 이 사회 보장 담당 기관들은 그 시점에만 해도 부분적으로 아직은 자신들의 과제를 완전히 수용할 형편에 있지는 못했는데, 이는 그 당시만 해도 동독 지역에는 아직 이를 위해 필요한 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조약은 지금까지 사회 보장을 담당한 기관들이 1991년중 공법적인 성격의 법적 능력을 갖춘 기관들로 전환되어 해당 기관들의 과제를 넘겨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3.5. 실업 보험 및 고용 촉진

동독 지역에서는 공적인 실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이는 경제의 생산성에 부담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임금 소득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경제가 시장경제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시작하자 필연적으로 노동력의 방출(放出) 현상이 생겨났다. 따라서 통합 과정의 시작과 더불어 동독 지역의 노동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제 전환으로 인한 고용감축의 대부분이 실업(失業)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즉 통합의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참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국가 조약은 이미 당시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의 고용촉진법에 상응하는 고용 촉진을 포함한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업에 대해 수당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라는 조치에 우선권을 두었다. 이와 관련해 조약 당사국인 동서독 정부는 실업 보험의 확충 작업에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10월 3일 부터는 서독의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이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동독의 대대적인 구조 변혁 과정을 감안, 이 법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소 완화된, 한시적인 특별 규정들과 더불어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되었는데, 이는 동독 지역에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라는 수단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외에도 동독 지역의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추가 조치로는 조기 퇴직 제도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었는데, 동독은 이미 1990년 2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2.3.6. 연금 보험

동독의 구 연금법은 서독의 연금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동독의 연금은 광범위한 최저 연금 규정 내지는 최저 기여금 규정으로 인해 그 수준이 평준화되었으며, 이전 직장 수입이 얼마였는가는 연금 책정에 별로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또한 동독 지역에서의 연금은 연동적인 체제를 갖추지 않아, 소득 수준에 따라 신뢰성있게 규칙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걸맞는 양로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성과(成果)의 정의(正義)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조약은 이미 동독의 연금 제도를 임금 및 기여금과 연관된 서독의 연금법에 따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로는 현재의 연금이 순임금 수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했다. 독일 연금법의 최종적인 조정 작업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서독 지역에 발효된 사회보장법(SGB) VI의 도입 및 동독 지역으로의 이 법의 확대·적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독지역으로의 동 법의 이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 특별법인 연금-이관법(Renten-Überleitungsgesetz)에 규정되었다. 이로써 1992년 1월 부터는 원칙적으로 전 독일지역에 단일한 연금법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연금법을 바로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뢰의 보호라는 원칙하에 연금 수혜자 및 연금 수혜 연령에 근접한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인 성격의 과도기 규정을 도입했다. 게다가 동서독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동독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2.3.7. 의료 보험

중앙에서 통제하는 국영 보건제도에서 비중앙집권적이고 자유로우며 다원화된 의료 구조로의 전환은 동독의 건강 관련 의료 구조를 서독의 부양 체제에 적합하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작업을 요구했다. 동독 국민에 대한 의료상의 부양 체제가 차질이 없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조약은 동독의 의료보험법을 서독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정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조약은 기존의 의료 구조를 잠정적으로 지속시키는 일 외에도 이를 서독의 의료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경시켜 나갈 것과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보험 조합들간에 계약적인 관계 형성을 규정하였다. 질병시 생계의 보장은 서독에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에 의해 지불되던 질병보조금을 질병 6주 기간 동안은 고용주가 계속 보상지불을 하도록 전환되었다.

통일조약은 독립적인 의료 보험 조합의 도입과 서독의 의료 보험 제도의 확대·적용을 통해 이같은 조정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사회보장법(SGB) V가 1991년 1월 1일 자로 동독 지역에서도 발효되었다. 이로써 동독 지역에 자유로운 보건제도를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인 환경이 갖추어졌다. 동독 보건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일조약은 또한 한시적인 특별 규정도 담고 있다.

2.3.8. 상해 보험

동독의 상해 보험법을 서독의 상해 보험법에 따라 조정한다는 점은 이미 국가조약에서 규정되었다. 당시 동독에는 서독에서와 같이 부문별로 세분화된 조직 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조약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 상해보험법을 동독 지역에 일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독의 상해보험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그대로 존속했다.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선 상해 보험의 조직에 관한 서독의 규정들이 동독에 확대·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사고 방지에 관한 법, 진료 행위, 재활(再活) 및 구금법이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결국 그 나머지, 즉 그때까지 미적용된 나머지 법규들이 동독 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2.3.9. 사회 부조 (Sozialhilfe)

서독의 전체적인 사회 보장 제도의 범주에는 이 외에도 공공 사회부조에 의해서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더 있다. 이 사회 부조는 다른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해 메꾸어지지 않는 영역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 공공의 부조는 일반 사회 보장 시스템이 개인의 특정한 응급 상황의 해결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거나,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는 개별적인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상관없이 작동되는 시스템이다. 이 사회부조는 기본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국가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곤궁한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에 따라 국가조약에는 사회 부조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합의했다. 물론 구 동독에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서독의 사회 부조 제도에 비견되는 사회복지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보조 규모가 소득, 재산 및 생계 필요 정도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사회 복지 제도는 중앙 정부의 업무로 동독의 국가재정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였다. 동독의 경우 사회 복지의 지원은 별로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지금을 받았고 장애자 시설 또는 양로 시설들은 중앙의 국가재정에 의해 재원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1990년 7월 1일 동독-사회부조법이 공표되면서 단계적인 조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동독 사회부조법은 그 목적과 과제 설정에 있어서는 서독의 사회부조법을 모방했으며, 이미 그 근본이 되는 원칙들, 즉 비우선 원칙, 자조의 의무, 개별 경우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적절한 개인적 부조라는 원칙들

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 법규는 주로 생계 유지의 보조에 국한되었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제까지 재원이 우선은 장애자 시설 및 양로 시설로 흘러갔기 때문이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서독의 연방 사회부조법이 몇가지 유보 조항을 포함한 상태로 동독지역에 확대·적용되었다.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사회부조의 관리가 이제 막 확충 단계에 있었으므로 연방부조법에 따른 부조는 1991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관료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부조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또한 동독의 최저 연금 수혜자들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사회 부조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조약과 더불어 연금 보험, 상해 보험, 실업 보험 보상금에 사회 보조금을 도입했다. 이는 곤궁 상황에 처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보조금 제도는 보험의 원칙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으로 과도기적으로 설정되었으며 한시적인 것이다.

3. 시장경제적 소유권 제도의 부활

사회적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소유권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제대로 기능하는 토지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재건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체계적으로 파괴되어 버린 법치국가적, 시장경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소유권 제도의 회복은 이미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1. 통일이전의 상황

구동독 소유권제도의 특징은 사적인 소유의 사용 가능성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토지(土地)의 법적 이용은 특히 사

회주의적인 이용권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 결과 합법(合法)적인 소유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되지 못했는데, 이는 특히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했다. 따라서 또한 법규에 따른 토지 대장(土地臺帳)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지측량 부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측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동독은 사회주의라는 단일 국가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갖는 공법(公法)적인 성격의 지역체로서 자기 재산을 갖춘 자유롭고 독립적인 지방 자치 단체나 주(州)가 없었다. 이른바 인민 소유의 경제단위인 기업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동독 기업들은 자유로운 운영의 가능성을 갖지 못했고,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도입과 관련해 비로소 그같은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3.2. 주요 규정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미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는 성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에는 법치국가적·시장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소유권제도의 도입이 예비되었다. 통일조약 제21조 이하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존의 법규들에 의해 국가 재산을 새로 생겨난 공법적인 지역체들(지방자치단체, 주), 기업들 그리고 신탁청에 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민법전(民法典)의 도입 작업은 동독 지역에 대한 ‘확대·적용 규정’에 의해 더욱 보완되었다. 이 법규들에 의해 인민 재산이 시민법적인 소유물로 전환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나 기타 물건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재산법’(財産法, Vermögensgesetz)도 또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本書 제 4 장 IV 2 참조).

3.2.1. 과거 인민공유 재산의 귀속

동독의 구 인민공유 재산의 귀속(歸屬)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주에 대한 물질적·법적 소유권 획득과 이같은 귀속을 토지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구 인민 공유 재산의 물질적·법적 귀속은 통일조약 제21조와 제22조, 그리고 이 조약에서 의결된 1990년 6월 17일자 신탁법, 1990년 7월 6일자의 지방자치단체 재산법 및 1990년 2월 21일자의 정당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소유권 문제에 관한 본질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신탁법(Treuhandgesetz)”이다. 동 법 제11조 2항에 의해 이제까지 인민 공유의 기업들이 1990년 7월 1일자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이와 동시에 기존 경제단위의 기금소유에 속해 있던 재산과 법인체 산하에 속해 있던 토지들이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었다. 동법 제1조 4항에 의거 신탁청은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제단위의 자본 소유자로 되었다. 제 2차 - 제 5차 시행령에 의해 다른 자산들도 신탁청에 귀속되었다. 신탁청은 이 자산들을 민영화할 의무를 지고 있다(본서, 제 5 장 IV.3 참조).

통일조약(EV)에서 의결된 바 재산의 물질적 귀속을 토지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등재하는 작업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은 구 인민공유 재산의 확정에 관한 법인 1992년 8월 3일자의 재산귀속법(VZOG)이다. 이 법은 원래 “기업 사유화 장애 제거 및 투자 촉진법”(약칭 “장애제거법”)의 일부로 1991년 3월 29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두가지 특별 규정, 즉 SDAG-Wismut에 의한 계약동의법과 사회보장재산법에 의해 보완되어졌다.

통일조약 제 21조는 1990년 10월 3일 구 인민 공유 재산(행정 재산)의 분배에 관한 규정이다. 행정 재산에 관한 소유는 기본법(基本法)의 과제 분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당 행정 담당 기관에 귀속되며, 1989년 10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누가 주로 사용했는가에 따른다. 소유권은 법적인 효력에 의해 해당 행정기관에 귀속되는데, 이같은 귀속은 재산귀속법(VZOG) 제1

조 (1)항 2에 따라 지역 담당 상급재정기관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1990년 10월 3일 현재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구 인민 공유의 재산은 통일조약 제22조에 따라 특별 연방법에 의해 분배된다(재정재산).

사용에 의한 물질적·법적 귀속 외에도 통일조약 제21조 3항과 제22조 1항 7은 원상 회복에 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채 어떤 공법적인 단체의 자산을 중앙 정부 또는 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지방 단체)가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자산들은 상급재정기관 책임자 내지는 신탁청장에 의해 해당 공법단체 또는 그 법적인 후속 단체에 반환된다. 이같은 원상회복 규정과 동열에 있는 것은 통일조약 제21조 2항(2 HS 3)의 규정인데, 이에 따르면 구 제국 재산은 법률에 의해 연방재산으로 된다. 원상 회복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연방 정부가 의결한 등록절차촉진법안(연방 상원 인쇄물 360/93)에 들어 있다.

구 인민공유 재산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조치의 실행을 위한 귀속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1993년 1/4분기 현재 상급재정기관과 신탁청에는 약 35만건의 재산권 귀속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약 42%가 처리되었다. 독일 통일 시점에 동독 지역에 6백만개 이상의 인민 공유 필지가 있었으며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 귀속 신청 한 건당 해당 토지가 평균 여섯 필지였음을 감안하면, 계산상 약 1백만건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1993년 1/4분기까지 접수된 약 35만건을 제외하면 아직도 약 65만건의 신청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2.2.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

정당 및 대중 조직의 재산에 관해서는 구동독 국회인 인민의회는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재산 관리 위원회(UKPV)로 하여금 국내외에 있는 동독의 모든 정당과 산하 조직, 법인 및 대중 조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과제를 부여했다. 이 기관들은 동 위원회(UKPV)에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산 상태를 지난 1945년 이후의 유래 및 잔존 여부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통보해야만 했다. 이 재산은 우선은 UKPV에 의해,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 발효 후에는 신착청에 의해, 신탁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신착청은, 과거 구소유권자가 그 재산을 기본법(基本法)의 의미에서 물질적·법적인 원칙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면, UKPV의 협조하에 그 재산을 구 소유권자 또는 법적인 상속권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구동독 지역의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동독의 정당들과 대중 조직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재산 공개라는 이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UKPV는 아직 완결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한때 이 기관들에 속했던 재산들을 확인하고 동독 지역의 공익적인 목적에 전용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독-소(獨-蘇) 친선협회의 재산 중 300만 마르크만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되었고, 2,500만 마르크는 “동서 해후” 재단으로 넘어갔다. UKPV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는 특히 다음의 단체들의 재산이 있다: 사회주의 통일당(SED)/민주 사회주의당(PDS) 소유 125개 업체, 기독교민주당(CDU) 26개 업체, 독일 민주 농민당(DBD) 2개 업체, 독일 자유민주당(LDPD) 19개 업체, 독일 민족민주당(NDPD) 15개 업체, 자유 독일 노련(FDGB) 2개 업체, 독일 청년 자유연맹(FDJ) 15개 업체, 독일 민주 여성연맹 3개 업체, 농민 상호부조연합(VdgB) 24개 업체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SED/PDS, CDU, DBD, LDPD, FDGB, FDJ, VdgB 와 독-소 친선협회는 총 1만개 이상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재산들의 귀속은 동독에서의 물권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3.2.3. 투자 우선

미해결 재산권 문제의 처리(자세한 것은 제 4 장 참조)가 이른바 원상회복 원칙으로 인해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통일조약은 투자법과 더불어 특별한 투자는 우선권을 가지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른바 이 우선권(優先權) 규정 (Vorfahrtregelung)의 사상적인 배경은, 구 소유권자의 재반환 이익은 동독 국민경제의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회복이라는 아주 공적인 이해 관계와 상충될 경우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상 회복에 앞서 투자 우선”이라는 원칙은 1992년 3월 22일자의 장애제거법과 1992년 7월 14일 제 2차 재산법 개정법률에 의해 그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었고, 특히 가능한 투자 대상물은 물론 예정된 투자 목적도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로운 투자우선법은 종래의 재산법 제 3조 6항과 8항, 3a조의 우선권 규정들과 투자법의 우선권 규정들을 단일한 규정으로 총괄하고 있다. 이 총괄 규정은 우선권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상호 교차적인 내용의 지침과 같은 이중 규정들을 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호간에 규정의 내용에 관한 합의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절차를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규정은 무엇보다 절차 문제에 있어 그 내용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그 사실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내용 변경도 수반해야 했다.

다음은 그 사실에 있어 본질적으로 변경된 내용들이다:

- 주거 공간 창출을 위한 투자 목적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정의
- 기업의 투자 목적의 보충
- 기업의 토지가 기업 투자의 일부인 경우 기업 토지를 투자 목적에 환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
- 구 소유권자에 대한 특별한 투자 절차의 마련
- 재반환 청구 범위에 대한 단일한 교섭
-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추후 투자증명을 보장

다음은 절차상의 변경 내용들이다:

- 절차의 단일화
- 투자적인 경우 재반환 청구권 배제에 대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는 가능성
- 외부 투자계획에 관한 동의시 구 소유권자 자신의 투자계획에 관한 청문 규정의 강화
- 매각 대금 정리에 관한 규정

3.2.4. 물권법의 개정

1993년 7월 연방 정부가 결의한 물권청산법(안)은 법적으로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토지에 관한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동독에서의 이용권은 토지 소유주의 참여없이 그리고 심지어 기존의 소유권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행사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무질서하여 이를 청산하기 위한 법규가 요구되는 토지 이용이 다반사였다. 그 결과 토지 소유권자와 토지 이용권자간의 법적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정리되었고 따라서 쌍방간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통일 조약은 유보 조항을 설정하여 이를 물권청산법으로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획 및 통제경제가 무너지자 한편으로는 주택, 농업·임업·상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의 사용권자, 설립자 및 취득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동독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간에 상당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통일 조약 및 1992년 7월 14일자 제 2 차 재산법 개정법률(유예)의 규정들에 따르면 이용권자들이 토지 소유주의 퇴거 요구에 대해 보호를 받았다. 물권청산은 토지의 이용 또는 취득과 정당한 이해 조정에 관한 민법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계획된 규정들은 다음의 원칙들을 담고 있다:

- 타인의 토지에 지은 건축 투자물은 비교적 잘 보호해야 한다. 동독 당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토지의 이용이 이용권의 부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토지 이용자와 토지 소유주간의 이해 조정은 민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 작업은 물권청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시가를 고려해야 한다.
- 토지 가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토지 소유주간에 50:50으로 분배해야 한다. 현재의 토지 가격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토지 관련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우연히 생겨난 이익이므로, 국가는 그 이익을 분배할 때에 동등 취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3.2.5. 채권 청산 - 계약의 유예

여가, 레크레이션 등의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한 경우나 임대차인들에 의한 건축 투자물은 각 경제적·사회적 이해를 고려하여 기존의 계약적인 이용관계를 민법(民法)에 맞게 조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법안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

그같은 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우선 이용자에 대한 보장이 요구되는데, 이같은 보장은 등록절차 촉진법에 들어 있는 계약-유예에 의해 가능하다. 과거 농업생산조합(LPG)이 사용한 토지의 이용자들에게는 일단 토지 소유주에 대해 그 토지를 소유할 권한이 주어진다. 토지소유주는 이에 대한 조정의 댓가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 유예는 해약 중단을 포함한다. 해약 중단은 계약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채권 청산법에 따라 청산되지 않거나 나중에 청산될 계약들이 우선 해약되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해약 중단은 제 2 차 재산법 개정법률에서의 유예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유상(有償)적인 것이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에게 해약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3.2.6. 토지 등기부 제도

능률적인 토지 등기 관청들은 구동독에 대한 투자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과거 동독에서는 토지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토지 소유의 의미가 아주 의식적으로 축소되어야 했다. 그 결과 토지 등기부 제도에 해당하는 부동산 업무는 기술적인 장비 부족은 물론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재했다. 과거 동독이 저지른 이같은 태만 행위들로 인해 동독의 각 주들은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측량 관청에 비치된 토지 등기부들을 사법 기관으로 환원시킨 후에야 정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토지 등기부 관청들의 상황은 전체적으로 긴장되어 있다. 1992년말 동독 및 베를린의 토지 등기부 관청에는 62만건의 미해결 신청건들이 놓여 있었지만 (물론 이 신청건들 중에는 일부가 등록 가능하거나 이의가 주어져 있거나 확정적인 신청건들이 아니었고 또 이제서야 새로 신청된 건물임), 1993년 7월까지의 약 49만 4천건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 91년말에는 미해결 신청건이 61만건이었다.

동독의 주들은 처리 건수를 늘리고 특히 투자적인 신청(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합의 내용나 토지저당권등의 등록)은 단기간에 처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연방 정부는 그와 같은 신청건들의 우선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관한 단일한 규정을 제공해 줄 법규를 마련중에 있다. 동독의 토지 등기부 관청들에서의 상황에 의해 투자가 장애를 받는 일은 따라서 대폭 줄어들었다. 물론 이는 다른 신청건들은 과거 구서독의 경우 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늘어난 미처리 신청건(부록 54 표 참조)들의 처리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이제까지 취해 왔고 또 조치할 계획들을 감안할 때 상황은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지역은 34,000건의 미처리 건수들이 1992년 12월말까지 거의 처리될 수 있었으며,

작센주의 경우에는 13만 1,000건에 이르던 미처리 신청건수가 1993년 3월에는 10만 4,000건으로 줄어들었다.

튀링겐주에서도 1992년 6월 이래 미처리 재고 건수는 56,000건이나 줄어들었다(1993년 6월 기준). 브란덴부르크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처리 작업이 있었다(7월말에 약 48,500건). 작센-안할트주에서는 1992년 12월에서 1993년 5월까지 미처리 재고 건수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동안(1993년 7월 기준) 미처리건의 처리가 계속 있어 왔다. 이는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들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재산담당 관청의 확대와 토지거래의 일반적인 추세를 통해 토지 등기부 관청들은 또 다른 도전들을 맞게 될 것이다.

신청 재고수를 재차 줄이는 길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부문에 있어 동독 주들(베를린 제외)의 법률가 수요는 현재 총 661명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신청건 재고 및 신청건들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이 수요는 약 50% 더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총 990명의 법률가가 필요한데 5개 동독 주들에는 다만 약 810명의 법률가만이 “독자적인” 주의 고용인으로 또 파견 인력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여기서 서독의 주들이 적어도 정상적인 상태에 이를 때까지 동독의 주들을 지원하는 것은 토지 등기부 관청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쌓여 있는 신청건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나아가 파견 기한을 줄일 것이 아니라 늘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독의 토지 등기부 관청에 고용된 인력들은 서독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장적응훈련 기간중 얻은 경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토지 등기부 관청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신청 재고건의 처리를 위한 보다 중요한 작업은 현대적인 정보 기술의 투입이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기술적

· 조직적 가능성의 검토를 위임 받은 연방-주 작업팀은 구서독에서 이미 시험을 한 전산처리(EDV)-절차를 전역에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 정보망 구상의 총 예산은 6천만 마르크인데, 비용의 절반은 연방에서 부담한다(부록 55 표 참조). 이 계획은 아주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992년 말까지 94개 토지 등기부 관청에 1,200개의 컴퓨터 작업장이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방의 재정 지원은 93년 1/4분기 말 현재 1,760만 마르크이며, 여타 확충 프로그램은 1995년까지 계속되는데, 중점은 올해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 등록절차 촉진법과 더불어 토지 등기부 정리 조치 외에도 현대적인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이제까지의 종이 형태의 토지 등기부 운영을 능률화할뿐만 아니라 토지 등기부를 완전 자동화하고 이로써 기술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활용하기 위한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술적인 가능성들은 또한 상업등기부 또는 조합등기부나 선박 등기부와 같은 기타 경제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7. 측량 제도

동독에서는 특히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단기간에 토지 측량을 실시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이같은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1) 미분리된 대지

동독 지역중 구 프로이센에 속했던 지역의 많은 (시내 중심가의) 토지들은 측량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토지 등기부에는 이 지역은 그 종류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단지 미분리된 토지에 대한 묶만 등재되어 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 건물 징세대장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한 - 토지 등기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등기부 등재는 불가능하다. 연방 법무성이 연방 상원에 제출한 대지 규정이 이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미분리 대지가 실질적인 신용 대

부를 위한 담보물이 될 수는 없는데, 이는 실질적인 담보가격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측량과 그에 상응하는 등록이 필요할 것이다.

(2) 큰 토지의 분할

특히 도시의 신축 지역에는 기존의 대지 소유권 관계가 아주 대규모의 경지를 형성할 때 소유권 물수 절차의 미비로 실제 상황과 들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측량이 필요할 것이다.

(3) 새로운 소유권 관계의 규정

동독의 신축 지역에는 종종 완전히 무질서한 소유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한 때 인민 소유에 속했던 개인의 대지들에 기존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건물이 지어졌다. 그 결과 “뒤죽 박죽”의 전혀 출처가 다른 대지 위에 주거 구역이 서 있게 된다.

물권의 청산 과정에서는 이 외에도 지상권 (Erbbaurecht)이나 현재 사용 중인 토지의 일부를 구매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필요한 측량은 단기간에 실행될 수 없다.

등록절차 촉진법에 들어 있는 토지분리법은 분리 결정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리 결정은 지도와 토지 리스트에서 생겨나는 분리 계획을 확정해 준다. 분리 결정을 통해 토지는 측량할 필요가 없이 토지 등기부에 적절한 형태로 확정된다. 이것은 미측량 토지의 확정은 물론이고 소유권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를 재분배, 분리 또는 물권청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규정 확정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교적 간단할 절차이다.

III. 구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 조달

통일과 더불어 독일에서는 모든 정책 부문, 특히 재정 정책 및 사회 정책의 기본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신연방주인 동독 지역은 물론이고 서독에도 해당하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사건인 독일의 통일은 미리 예견할 수도 없었던 것이며, 또한 그 재정적인 결과들은 계획을 세워 대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동독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포함한 공공 재정 이전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정 정책을 벗어나는 상황의 전개, 즉 예를 들면 동독 지역의 자본스톡크의 상태, 동유럽의 시장 상황 또는 임금협상 당사자들의 임금 협약 등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1. 공공 재정 이전의 전개 과정 및 구성

독일의 재정 정책 및 사회 정책의 과제는 구동독의 구조 조정 과정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담들을 사회적으로 완화하는데 있다. 노동 시장 정책이나 소득 보장 조치를 대규모로 실시하지 않고는 구동독 경제의 체제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1990년 이후 독일의 공공 재정의 전개 상황은 통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1 구동독 지역에 대한 공공 재정 이전

우선 이전액의 규모만 보아도 독일의 재정정책이 부딪힌 도전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표 1 참조). 연방의 세금 수입 및 행정 수입 초과분 역 수입을 뺀 순이전액의 규모는 1991년 1,070억 마르크에서 1992년 1,150억 마르크, 그리고 1993년에는 1,380억 마르크로 늘어났다.

표 1

구동독지역에 대한 공공 재정 이전 (사회보장비 포함)

(단위: 십억 마르크)

	1991	1992	1993
I. 총 재정 이전			
연방 예산 1)	79	85	105
“독일통일” 기금 2)	31	24	15
유럽공동체 (EC)	4	5	5
연금 보험	-	5	12
연방 고용청 3)	24	24	18
서독 주/지자단체	5	5	10 4)
총 계 5)	140	152	177
II. 역 수입			
연방 추가 세수	21	35	37
추가 행정 수입	2	2	2
총 계	33	37	39
III. 순 이전액 6)			
(I과 II의 차액: I-II)	107	115	138

註 :

- 1) 동독의 주/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연방 지불금과 구 동독지역에서의 연방 지출. 92년분은 실지 이전 금액이고 93년은 추후지불을 포함한 예상치임
- 2)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연방 및 주들의 보조금은 제외
- 3) 동독 총 결손액(연방보조금은 제외). 연방 보조금을 포함한 동독 지방자치단체의 적자액은 1991년 250억 마르크, 1992년 385억 마르크, 1993년 360억 마르크임

- 4) 연방 재정건실화계획 포함 (독일 통일 기금 보조금)
- 5) 이외에도 동독에 대한 세금 혜택을 근거로 한 연방 및 구서독 주들의 세수 초과분도 동독 주들을 위한 지출에 포함됨
- 6) 통일로 인한 공공 재정의 총 재정적 부담액은 이전 금액과 구분해야 할 것임. 총 부담액에는 이전 금액외에도 예를 들면 통일로 인한 이자 비용, 구소련군에 대한 지출등이 속함. 또한 총 부담액 산정에 있어 통일로 유발된 서독의 세수 초과와 분단 지출금의 제외는 반대 효과를 가진 것으로 계산해야 할 것임

1.2 “독일 통일” 기금

“독일 통일” 기금은, 연방과 서독의 주들이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간 동안 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신설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원조달기구이다. 이 기금을 설정한 것은 통일 조약 제7조 3항이 구서독주들과 구동독 주들의 조세(租稅) 구조상의 상당한 차이를 감안,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 독일의 재정적 균형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 기금은 부족한 조세수입을 보충해 준다. 이 기금의 재원 조달은 연방과 서독의 주들이 담당하게 된다.

동독 주들과 베를린(동베를린)은 이 기금으로부터 그 주민수에 비례하여 일반적인 재정 수요에 대한 특별 지원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는다. 동독 주들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재원의 40%는 그 주에 속해 있는 지방 자치 단체들에게 재분배해 준다.

동독주들의 늘어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금의 규모도 몇배로 늘어났다. 1993년 3월 13일 타결된 “연대 협약(Solidarpakt)”에 따르면 1990년-1994년 기간중 기금의 총지출은 1,607억 마르크에 이른다. 이중 950억

마르크는 신용 차입을 통해, 그리고 약 660억 마르크는 연방 재정의 보조금(496억 마르크)과 서독 주들의 보조금(161억 마르크)를 통해 마련한다.

다음의 표2 와 표3은 동독 주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에 대한 기금의 연도별 지출 내역이다.

표 2

“통일 기금”의 연도별 지출 내역(1990-1994)

(백만 마르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총 계
기 금 총 액	22,000	35,000	33,900	35,205	34,600	160,705
동독주지출(60%)	*	21,000	20,340	21,123	20,760	83,223
지방자치단체(40%)	*	14,000	13,560	14,082	13,840	55,482

*) 1990년에는 총 220억 마르크의 통일기금이 지출되었으나 각 주별 재정지출은 확인되지 않음

1.3 유럽 공동체

EU 프로그램으로부터 독일로 역수입된 지원금이 얼마인지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그 중간 기관 또는 사기업으로 흘러들어간 EU의 지원금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독으로 유입된 대부분의 돈은 “EU 구조 조정 기금”에서 온 것으로 그 금액은 1991년-1993년간 총 30억 ECU(약 60억 마르크)에 달한다. 동독과 동베를린 지역은 1994년부터는 이른바 EU 지원 체제에서 “목적 그룹 1”⁵⁾ 지역에 속한다.

5) 역주: “목적 그룹 1”이란 EU의 지역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국별 분류를 말하는 것으로, 동독을 비롯하여 폴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등이 속함.

표 3

각 신연방주(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대한 “통일기금” 연도별 지출내역

(백만 마르크)

동 독 주	주민수(%)	1991	1992	1993	1994	총계
작센	4,663,545 (29.7)	10,430	10,059	10,440	10,620	41,189
작센-안할트	2,810,006 (17.9)	6,295	6,069	6,290	6,182	24,837
튀링겐	2,551,106 (16.2)	5,717	5,519	5,711	5,613	22,560
브란덴부르크	2,527,266 (16.1)	5,626	5,458	5,658	5,560	22,302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883,340 (12.0)	4,191	4,064	4,216	4,144	16,615
동베를린	1,291,172 (8.2)	2,741	2,730	2,890	2,841	11,202
총계	15,726,435 (100)	35,000	33,900	35,205	34,600	138,705

주) 주민수는 199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각 연도별 통일기금 수혜규모는 그 전해의 주민수를 기초로 한 것임.

1.4 사회 보장비 지출

구동독 부흥을 사회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은 구서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지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사회보장비 재정에서 나온다. 연방은 제1차 국가 조약에서 합의한 바 20억 마르크의 실업자 보험 및 7억 5천만 마르크의 연금 보험에 대한 첫 재정 지원외에도 통일 후 추가적으로 동독 사회보장비의 부족분을 떠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은 1990년 동독의 모든 사회 보장 부문에 대해 연금, 실직자 지원금 및 의

료 보험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138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부문별로 사회 보장 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서독의 각 사회 보장기관들의 연합이 형성되었다. 이 시점 이후부터 서독의 사회보장비 지불당사자들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겪게 되었다. 1991년-1996년 사이 서독의 연금 수입중 약 580억 마르크가 동독의 연금 지불에 사용되며(부록 Nr. 56-61의 표 참조), 동 기간중 연방 고용청으로부터는 2,000억 마르크가 적극적인 노동 정책 및 실업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지출된다. 연방은 연금 보험, 실업자 지원금, 연금 수혜시까지의 과도기간에 대한 보상, 조기 퇴직 연금 및 전쟁 희생자 지원금에 대한 연방 보조금의 형태로 1991년-1996년 기간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사회 보험을 위해 1,450억 마르크를 조달한다. 따라서 1991년-1996년 기간중 서독의 사회보장비 분담자들 및 납세자들은 동독 주민들의 사회 보장을 위해 약 4,000억 마르크의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표 4 참조).

2. 구부채(舊負債)의 처리

동독에서 지난 40년간의 공산주의식 명령경제가 남겨 놓은 구부채는 현재 약 4,000억 마르크로 추산되고 있다. 이 부채는 약 2,300억 마르크에 이르는 신탁청의 부채, 1,400억 마르크에 이르는 채무 청산 기금(KAF) 및 동독 주택 부문의 구부채중 일부(약 300억 마르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부채는 이른바 “구채무 변제 기금”(Erblastentilgungsfonds)이라는 항목으로 총괄되는 부채들이다.

1992년 10월에 출간된 1990년 7월 1일자의 신탁청 개시 대차대조표를 보면 신탁청은 이미 당시에 2,090억 마르크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 부채들은 기업들의 기존 부채, 차액보전 청구들, 채무 청산 기금 부채, 그리고 사회 계획의 실현과 환경 오염의 제거를 위한 보조금에서 생겨난 것이다. 게다가 강화된 기업 재정비 조치들은 추가 지출을 가져다 줄 것이다.

표 4

사회 보장 부문에서의 재정 이전

(십억 마르크)

재정 이전	1991	1992	1993	1994-96	1991-96
1. 노령 보장	9.4	15.1	24.5	87.5	136.5
연금보험(RV) 1)	-	4.5	12.0	41.3	57.8
BMA-재정(연방보조금) 2)	9.4	10.6	12.5	46.2	78.7
2. 노동시장정책/실업보험	31.5	45.6	44.6	136.1	257.8
연방고용청(BA) 3)	25.3	38.5	36.6	100.0	200.4
BMA-재정(조기퇴직 등) 2)	6.2	7.1	8.0	36.1	57.4
3. 전쟁희생자 (BMA-재정) 3)	0.4	1.0	1.7	6.1	9.2
4. 합 계	41.3	61.7	70.8	229.7	403.5
사 회 보 험	25.3	43.0	48.6	141.3	258.2
BMA - 재정	16.0	18.7	22.2	88.4	145.3

1) 기준 : 연금 보험 보고서 1993년

2) 91년, 92년은 기지불, 93년은 지불 예정, 94-96년은 계획 수치임.

3) 91년, 92년은 기지불, 93년은 지불 예정, 94년-96년은 계획 수치임.

채무청산기금의 부채들은 구동독 국가재정의 구부채(약 300억 마르크)와 화폐교환시 차액보전 청구(약 1,100억 마르크)로 구성되어 있다. 동독의 신용기관들과 대외무역업체들은 차변과 대변의 불균형적인 교환율, 그리고 비효과적인 청구권들로 인한 손실들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가 붙는 차액보전 청구권을 분배받게 되었다. 추가로 이전 루블화(구 공산권 국가들과의 사업에서 생겨난 바 국영은행의 옛 청구권에 대한 가격 결제)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가 취해졌다.

4,000억 마르크의 총부채는 그 대부분이 새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필요가 없다. 재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연간 300억 마르크 이상의 원리일 뿐이다. 이 부채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은 1995년부터 연방이 떠맡게 된다.

3. 1995년까지 이전 재원의 조달

총 이전 재원의 조달은 세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 수입의 증가, 지출의 축소 그리고 신용 차입을 통한 조달이 그것이다.

1991년의 경우 3.6%의 성장율을 기록한 서독 국민총생산(GNP)의 1.5%가 통일로 인한 경제 성장이며, 이는 구서독 지역에 약 200억 마르크의 세수(稅收) 증가를 가져다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독 주민들과 기업들의 세금납부도 국가 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직접세(1991년 7월-1992년 6월간 연대 부과금(Solidaritätszuschlag)) 및 간접세(석유세, 담배세, 보험세, 부가치세)의 인상을 통해 1991년과 1992년에는 총 440억 마르크의 세수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각 세수(稅收) 부문은 전체 재정내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이른바 “全體充足의 원칙”), 독일 통일과 간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지출의 삭감은 중요한 재원 조달의 원천이 되고 있다. 과거 분단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통일로 인해 폐지되었다. 1992년까지 이로 인한 지출 삭감은 400억 마르크 이상이다. 1991년 제정된 조세변경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그동안 베를린 지원금 및 국경지역 지원금과 같은 독일 분단에 따른 세금 혜택이 사라졌다.

여행 외환 기금(Reisedevisenfonds), 통과여행 일괄금(Transitpauschale) 그리고 정치범 석방 자원(Mittel für Häftlingsfreikauf)의 폐지는 1991년 약 45억 마르크의 예산 절약을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면 국방예산의 삭감이나 다른 장소에 저축을 할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유예 협약(Moratoriumsvereinbarung)의 연장을 통해 예산 재편성을 위한 운신(運身)의 폭이 상당한 정도로 넓어졌다.

동독의 체제 전환 과정을 위한 자원 조달은 특히 재정 적자에 다시 반영되어 나타난다(표 5 참조).

표 5

1989년-1992년간 연방 및 공공 부문 재정 적자

(십억 마르크)

재정 적자	1989	1990	1991	1992
연 방	-20.0	-48.1	- 53.2	- 39.3
전체 공공 재정	-27.1	-93.6	-123.8	-116.0

4. 연방국가식 재정 균형(均衡)을 위한 조정

1994년 12월 31일로 “독일 통일” 기금이 만료되므로 이제는 연방과 각 주들의 의지에 따라 전독일적인 재정 이전 체제가 이를 대신해 등장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체제의 뼈대가 되는 사상은, 동독 주들과 베를린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이른바 주들간의 수평적(水平的) 재정 조정 체제에 편입시킨다는 것이다.

1993년 4월 13일-23일간에 있었던 “연대 협약” 논의에서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는 동독주들이 적절한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규모의 재원 이전을 보장한다는데 합의했다. 1995년에는 이 이전 재원은 약 57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독주들은 이 이전액의 상당 부분을 수평적 매상세의 조정, 각 주들간 재정 균형을 위한 조정 작업 및 “독일 통일” 기금의 부채상환 보조를 통해 함께 재원 조달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매상세에 대한 주정부의 세수(稅收) 비율을 44%로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연방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이전액을 107조 2항 이하의 연방 추가재정의 할당과 104조 4항 이하에 규정된 재정지원 형태로 마련할 것이다.

연방국가식 재정 조정이라는 이 새로운 규정은 동독주들의 독립적인 예산 운용과 제정계획을 위한 지속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며, 동독주들로 하여금 교통, 교육, 보건 및 환경 보호 부문에 있어 사회 간접 시설의 보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해준다. 중기적으로 보면 동독지역에 성장이 유발되어야만 사회적 재정 이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연방 재정건실화계획(FKP)의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특히 국방 부문, 인력 부문 및 국가지원 부문에 대한 절약 정책을 통한 안정화조치들이다. 임금대체지불금의 악용은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세금 혜택의 폐지, 부가가치세 및 보험세 인상을 통해 예산에 대한 부담액은 150억 마르크나 줄어들었다. 나머지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5년부터는 연대 부과금(Solidaritätszuschlag)이 재도입된다.

재정건실화에 대한 압력이 증가되자 계속적인 예산 절약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절약, 건실화 및 성장 프로그램”의 구도속에서 - 사회 보장 부문에서도 - 대폭적인 절감이 이루어졌다. 인력비의 절감, 모든 개별 예산의 동결, 국방비의 삭감, 임금대체지출과 가족부양비보충을 위한 지출 절약, 그리고 강력한 예산 남용 근절책 등을 통해 공공 재정의 절감분은 이미 1994

년 250억 마르크에서 1996년에는 350억 마르크로 늘어날 것이다.

이같은 건설화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구조적인 결함들을 제거함으로써 독일 기본법 제115조에 규정된 신용 한도 초과라는 예외 규정을 다만 단기간으로만 활용하고, 나아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통일의 재원 마련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지출 삭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세율 인상 조치나 대규모의 신용 차입은 단지 일시적으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이다. “연방 재정건설화 계획”과 “절약, 건설화 및 성장 프로그램”은 연방 지출의 삭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연방 재정건설화계획은 동독 부흥을 위한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들간의 재정 관계는 “구채무 변제 기금”의 재원 조달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절약, 건설화 및 성장 프로그램은 공공 재정의 지속적인 안정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이같은 안정화는 유럽 경제통합 및 화폐통합의 수렴(收斂)기준⁶⁾을 감안할 때 계속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 역주: 수렴(收斂)기준(Konvergenzkriterien) - 통칭 “조화(調和) 기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기준은 EU가 유럽통화연합(EMU)의 제 3단계 진입을 위해 설정한 기준으로, EU 집행위 및 유럽통화기구(EMI)는 각 회원국의 경제적 수렴(조화) 상태를 평가하여 제 2단계 유럽통화연합으로의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현재 EU가 설정한 기준은 인플레이 및 장기 이자율이 3개 우량 회원국의 평균 인플레이 및 이자율보다 각각 1.5% 및 2%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對GDP 재정 적자율 및 공공 부채비율이 2% 및 6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IV. 경제 통합의 과정

1. 신연방주 전체 경제의 발전 현황

1.1 국내 총생산(GDP)의 발전

동독 지역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1990년, 1991년에 생산 감소가 있었으나, 1992년 동독지역 국내총생산(GDP)은 거의 10%에 이르는 성장율을 보였는데(부록 Nr. 62 표 “동독 GDP 생산 및 소비” 참조), 이같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자극을 준 것은 투자 활동이었다. 국내경제의 성장은 지속적인 고용 감소 추세를 중단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같은 추세를 지연시켰다.

노동시장정책적인 조치들(단축 조업, 고용 창출 조치(ABM), 직업 재훈련 조치, 노인 과도기 연금(Alterübergangsgeld))에 의한 고용수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1991년, 92년의 연평균 190만명에서 1993년에는 연평균 160만-180만명으로 감소), 지난 해 동독 지역의 전체 실업자수는 1992년 수준(연평균 118만명)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총 취업 가능 인구의 수도 줄어들었다. 동독의 취업 가능 인구는 1992년 평균 630만명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에 있었다(취업 가능 인구,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정책적인 조치들에 관해서는 부록 Nr. 63-72의 표들을 참조할 것).

그러나 동독과 서독은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격차가 크다. 1992년 동독 지역의 생산성은 서독 지역의 40%정도였다. 동독 지역의 취업 인구당 임금코스트는 1991년과 1992년 사이 36% 늘어났다. 이같은 수준의 임금코스트의 증가는 생산성의 증가분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생산 단위당 임금코스트 - 즉 임금코스트와 순생산(純生産)간의 비율 - 는 약 15% 늘어났다. 이같은 산정가는 물론 전체 경제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며, 다양한 발전을 보인 각 경제부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생산업(Produzierende Gewerbe) 부문의 생산은 1990년, 1991년에는 뚜렷한 감소를 보이다가 1992년에 들어 현저히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건설업에 의한 것이었다. 공업 부문의 생산은 1992년에도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한때 300만명에 이르던 공업 부문 취업자수도 1993년 6월에는 74만명에 불과했다. 1993년 상반기중 제조업의 순 생산 지수는 1990년 하반기를 100으로 잡을 때 65에 불과했다. 물론 제조업 부문내에서도 몇몇 업종들은 적응에 있어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우선은 부흥하는 건설 경기를 탄 업종들이나 주로 지역 시장을 겨냥한 업종들이 이에 속한다. 제조업 부문외에도 농림업이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1989년 동 부문 종사자수는 85만명이었으나 1992년 현재 그중 1/4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해 판매업, 운수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경제는 통일 후 뚜렷이 개선되었다. 이 업종들은 건설업과 더불어 현재까지 동독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1.2 수요와 생산간의 격차

이미 통일 직후부터 동독 전체 경제는 경제적인 성과와 국내 소비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1991년 동독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는 국내생산(GDP)의 거의 두배에 달했다. 1992년에도 이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는데, 이는 11.2%나 증가율을 보인 소비가 국내 생산보다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균형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구서독 지역과 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의 수입은 1992년 총 2,360억 마르크에 달했다. 물론 이같은 동서독간의 교역량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동독을 최종대상으로 한 많은 외국 상품의 수입이 우선은 서독기업들의 중간 개입으로 인해 서독지역에 대한 수입으로 산정되었다가 다시 동독으로 재공급되었다는 점이다.

수출입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외 수지는 1992년 1,970억 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1년 1,720억 마르크의 적자폭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이 무역적자에 대한 자원 조달은 대부분 서독으로부터의 자원 이전에 의해 충당되었다. 무역적자폭이 늘어남에 따라 서독 자원 이전에 대한 동독 국민경제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높은 수준의 수입 초과에 상응해 민간 소비는 1992년 약 2,120억 마르크를 기록했으며, 그 자체로 동독 GDP에 맞먹는 규모가 되었다. 따라서 동독 주민들의 공급 상황은 이같은 지수를 감안해 볼 때 크게 개선되어 1992년에는 서독의 약 60% 수준에 이르렀다. 양 지역의 이같은 생활수준의 차이는 아직도 그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양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격차보다는 작은 것이다. 국가 소비, 즉 주민 및 기업에 대해 불가피하게 국가가 지출한 금액은 1992년 주민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서독 수준의 85%에 이르렀다. 경제 활동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동독지역의 총 시설투자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동독지역의 총 시설투자는 1992년 1,160억 마르크로 1991년에 비해 24% 성장을 보였다. 이같은 투자 활동은 생산 용량의 확충, 생산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대폭적인 생산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1992년도 개인 소비에 대한 물가지수는 1991년도에 비해 약 10% 높아졌다. 그 원인은 1991년에 제 1차 임대료 및 에너지 가격 인상과 소비재에 대한 정부보조금 폐지가 물가에 영향을 준 데 이어서 제 2차 임대료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가 변동에 관해서는 부록 Nr. 73-77 참조)

1.3 주민의 소득 현황

주민들의 소득 상황은 - 민간 가계의 가처분소득 면에서 볼 때 - 통일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부록 Nr. 78-79의 표 참조).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 민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1991년 29,600 마르크에서 1992년에는 36,800 마르크로 24.3%의 증가를 보였다. 동독 가계의 소득은 이로써 서독 지역의 가계들과 비교해 상당한 회복을 보였다. 1991년 동독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서독가계의 52.8%였으나 1992년에는 이미 64%로 늘어났다. 가계 구성원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91년 12,400 마르크(서독 수준의 49.4%)에서 1992년에는 15,500 마르크(서독 수준의 58.1%)로 늘어났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23%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동독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1991년과 1992년 사이 실제로 12%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가계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은 임금과 봉급이다. 취업자 1인당 월 총 임금 내지 총봉급, 즉 월 평균 소득은 1991년 1,820억 마르크에서 1992년에는 2,470 마르크로 늘어났다. 이는 1990년 하반기에 비해 85%나 증가한 것이며, 물가상승율을 산정하더라도 50% 이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동독 취업자들의 임금은 1992년 월 평균 소득 2,470 마르크를 기록함으로써 서독지역 취업자의 63% 수준에 이르렀다(월 평균 총소득에 관해서는 부록 Nr. 80-85의 표 참조).

동독 지역의 다른 중요한 소득원은 민간 가계에 대한 이전금이다. 이 소득에는 무엇보다 국가가 지불하는 사회보장비, 연금, 실업 수당 및 실업 보조금, 단축조업보조금, 사회부조금, 주택보조금, 자녀보조금 등이 속한다. 1992년 이 이전액은 930억 마르크였는데, 이는 동독 가계 가처분소득의 38%나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서독의 경우 그 비율은 25%로 현저히 낮다. 동독 지역 민간가계의 소득상황에 있어 국가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같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노동시장 상황에 그 요인이 있다. 표본추출한 민간 가계의 월 가처분소득 및 지출에 관한 개관은 부록(Nr. 86-97)을 참조할 것.

2. “동독 부흥”(Aufschwung Ost) 전략

2.1 경제정책적 도전

통일 독일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 작업은 전혀 다른 경제정책적인 도

전들을 제기했다. 40년간 계획경제하에서 경제의 근본구조가 파괴되었고 일방적인 경제관계를 강요당해 온 한 국가(동독)를 이미 분업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고도로 현대화되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민 경제(서독)내로 성공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 수준에 걸맞는 시간 안에 통합해내는 작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통일 직후 동독의 전체 경제의 상황은 점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속한 정치적 행동을 요구했다. 즉 동독 지역의 사람들에게 중기적으로는 경제 구조조정의 어려운 국면을 맞아 신뢰할만한 미래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인 성공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를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1990년말/1991년초 “동독 부흥” 전략이 수립되었는데, 이 전략의 핵심적인 목표는 중기적으로 자력 성장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그동안 동독 지역에서의 구조 조정 과정의 경험들을 기초로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그 강조점에 있어 다소의 변화가 있기도 했지만, 이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지금까지도 연방 정부의 정책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민간 투자 활동의 장려 및 전반적인 투자 지원을 통한 민간 창업 지원
-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 동독 기업에 대한 판매 조건의 개선
-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 재민영화 및 기업 정비 (이에 대해서는 제 5장 IV.3 참조)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조 붕괴를 사회적으로 측면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정책적인 수단의 투입
- 지역 정책을 통한 구조 조정 과정의 측면 지원

2.2 구동독 부흥을 위한 공동 대응책

“동독 부흥” 전략은 1991년 3월 8일 연방정부가 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을 의결함에 따라 강화되었다. 1991년과 1992년 매년 120억 마르크의 자금을 투입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효과적인 투자 지원과 고용 창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 결산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소기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의 투자프로그램)와 노동 시장 정책(ABM)등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초기 금융 및 과도기 금융 외에도 교통, 주택, 도시 건설, 환경 보호, 대학 부문 등에서 생활 환경의 개선이라는 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특히 공동대응책을 기초로 투자 보조금 및 50%의 특별 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 :special depreciation)을 累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고 12%의 투자 보조금을 92년 6월 30일까지 연장(그 이후는 8%)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급히 필요한 민간 투자활동이 지속적으로 촉진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지역 경제 지원(Regionale Wirtschaftsförderung)”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商工業(Gewerbliche Wirtschaft)”과 “경제 관련 인프라스트럭처”에 약 145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내지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은 동독 지역의 고용과 구조 변화에 중요한 자극을 주었다. 공동 대응책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1990년에 도입된 경제지원의 결함들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성장지향적인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2.3 민간 투자의 장려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과 마찬가지로 이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은 민간 투자활동의 장려이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민간 투자가 있어야만 동독 기업에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충분한 수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

문이다. 연방 정부는 투자 장려를 통해 한편으로는 기존 기업의 현대화 및 구조 조정,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국내외 기업을 동독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방 경제성은 동독 주정부 차원에서의 간담회(현재 50여회 개최) 실시, 국내외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진흥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해 동독지역의 이같은 부흥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인 투자가들에게 특별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지 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동독이 갖고 있는 입지상 잇점들을 전달해 준다.

2.3.1 주요 장려 조치

민간투자 장려를 위한 주요한 조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시설자산 중 소모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새로운 경제체의 구입 및 수리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보장: 기업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장려프로그램의 우선 순위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 조치는 법률상 청구권과 이익 추구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기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기업측으로 볼 때는 투자보조금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算定을 용이하게 해주고, 투자가들에게 대해서는 투자계획의 안전도를 높여 줌. 재정정책상 운신의 폭이 좁아 일반적인 장려 조치는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보장되며, 이에 따라 판매업, 은행 및 보험업, 전력 및 가스 공급등은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물론 공업 및 수공업 부문의 특정 동독 투자가들에 대해서는 특히 구동독 지역의 자기 자본 형성에 있어 이들이 지닌 취약점을 보완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고수준의 투자보조금이 보장됨.
-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공동대응책의 프로그램내에서 상공업 부문의 투자계획 장려 및 준경제적인 지역 인프라스트럭처의 확

층을 위한 투자지원금의 승인: 특히 판매가 초지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 입지 선택에 보다 여유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 투자지원금은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 실행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줌. 주별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우선권을 둘 경우 문제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함.

- 자기자본 확충 지원프로그램과 ERP-대부 프로그램을 통한 유리한 이자의 융자 보장: 이 조치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창업지원과 기존업체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EKH(자기자본확충 지원)-대부의 경우 자기자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파산에 대한 책임, 이자등급과 상환상의 유리한 조건) 자기자본의 부족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함. ERP-대부는 필요한 외부금융에 대한 자본서비스로부터 생겨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줌.
- 경제재의 구입 내지는 수리 비용 확충 또는 수리한 건물의 복구 비용의 50% 수준에서 특별 감가상각의 보장: 이 조치는 순이익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해 줌. 이로써 동 조치는 특히 서독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활동을 벌이는데 있어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됨.

2.3.2 지원의 효과

이 조치들과 연관된 광범위한 투자 장려는 동독지역의 투자활동을 촉진시켰다. (부록 Nr.98-100 표 참조). 이에 따라 약 200억 마르크 상당의 “지역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공동체 과제에 따른 투자지원금과 316억 마르크 상당의 ERP-대부프로그램 및 EKH-대부프로그램에 따른 대부등에 의해 통일 후 총 1,500억 마르크의 투자장려금이 제공되었다.

이외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투자 장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1년-1993년간 투자보조금에 대한 세수 감소만해도 100억 마르크에 이르며,

총 투자보조적인 지원에 대한 세수 감소는 약 370억 마르크에 이른다. 정부 차원의 투자 장려의 결과 약 3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확보되었다.

이같은 장려조치로 인해 동독지역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서독 투자자들만 해도 1991년에 260억 마르크, 1992년에 420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에 투자한데 이어, 1993년에는 490억 마르크를 동독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독일 연방 우편에 대한 투자 포함).

1993년중 모든 민간 투자 및 공공 투자를 포함한 동독 지역 총투자는 전년에 비해 약 20%가 증가한 1,400억 마르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의 투자총액은 872억 마르크, 1992년에는 1,156억 마르크였다.

동독 지역의 투자 곡선(投資曲線)이 뚜렷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양지역을 비교해 보아도 나타난다. 이 두 지역의 투자를 비교해 보면 또한 투자면에서 동독과 서독 지역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졌는지를 알 수 있다. 1993년 주민 1인당 총투자를 보면 동독은 서독 수준의 97%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 1인당 투자에서 동독이 서독 수준에 아직 못미치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부문에 있어서의 불리한 상황에 기인한다. 그러나 주택 부문에서도 뚜렷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역의 건축허가는 이미 1992년 말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주택건설 부문을 제외한 민간 기업의 투자 활동 강도(強度)를 보면 동독은 1993년 처음으로 서독을 능가했다. 동 분야의 주민 1인당 투자를 비교해보면 동독은 서독보다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3 투자 장려의 지속

동독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 과정은 특히 활발한 투자 활동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회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서독보다 높은 고수준의 투자를 앞으로 수년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사정과 또 여전히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동독의 입지를 감안할 때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에 명백히 우선권을 두는 정책은 향후에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의 다음 조치들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1992년 7월 중기적인 경제지원 실행 결의
- 1993년 초 발효된 것으로 특히 구동독 지역 공업 및 수공업 부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업체당 매해 100만 마르크까지의 투자총액에 대해 실시하던 20%의 투자 지원의 연장 및 개선 조치
- 1993년 초 발효된 것으로 1994년 중순까지 투자개시의 경우 8%의 투자보조금의 연장과 1996년 말까지의 투자 개시에 대한 5%의 투자보조금의 도입 조치. 1996년말까지는 모든 특혜적인 성격의 투자는 완료됨. 판매업, 은행 및 보험업, 전력 및 가스공급 부문은 이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산업입지안정법(Standortsicherungsgesetz)에 따라 특별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을 1996년말까지 2년 연장 조치
- 산업입지안정법에 따라 동독 지역의 재무 행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 자본세 및 재산세 포기를 1995년 말까지로 1년간 연장.
- 1993년 봄 연대협약의 합의에 따른 다음 조치들:
 - ① “지역 경제구조 개선” 공동체 과제의 확충(25억 마르크)
 - ② 자기자본지원(EKH)-프로그램의 대부조건 개선(5억 마르크)
 - ③ ERP-특수자산의 이자보조금 증액(18억 마르크)

- ④ 지방자치단체 일괄투자액의 증액(15억 마르크)
- ⑤ 산업관련 연구개발 지원(2억 마르크)
- ⑥ 독일부흥은행(KfW)의 주택현대화 및 보수프로그램의 확충(300억 마르크 융자총액을 600억 마르크로)

2.4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

“동독 부흥” 전략에는 금융적인 차원의 동기 부여 외에도 투자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통일 후 몇달이 지나면서 특히 불명확한 소유권관계, 미비한 행정,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오염 잔재와 관련한 문제들이 동독지역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처음부터 이같은 투자 장애요인들의 제거하는데 최고의 정책 우선권을 두어 왔다.

지난 3년간의 결산을 보면 정부의 이같은 의지가 중요한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볼 수 있다.

- 투자우선 원칙의 법제화: 통일조약에서는 “보상 이전에 반환(Rückgabe vor Entschädigung)” 원칙이 확정되었는데, 소유권 문제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점점 난관에 부딪히자 이 원칙은 “반환 이전에 투자(Investition vor Rückgabe)”라는 원칙에 의해 보완됨(이에 대해서는 제 5장 II, 3.2.3 부분을 참조할 것). 이를 통해 이제는 불명확한 소유권 문제로 인해 투자가 실행되지 못하게 될 필요가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방, 주정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신탁청이 자체 관리 자산을 반환 청구권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임. 구소유주는 다른 투자자들과 유사한 투자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이같은 매각을 저지할 수 있음.

- 행정망 정비의 가속화: 광범위한 인적 지원 및 물적 지원을 통해 특히 투자활동에 중요한 미해결 재산관리청과 토지등기소등에 있어 난관 제거(이에 대해서는 제 3장 VII 참조).
- 계획 및 허가 절차의 신속화: 이미 1991년 12월 교통로계획촉진법(Verkehrswegeplanungsbeschleunigungsgesetz)이 발효되어 관할 관청의 통합, 이중 검사의 폐지, 행정 관청 및 지방 자치 관청에 있어 새로운 기한 설정 등을 통해 계획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켰음. 이 과정에서 환경 및 자연 보호라는 이해(利害)를 반영했고, 교통로 계획의 질적인 수준과 관련한 물질적인 요구들을 그대로 충족시킴. “독일 통일”이라는 교통 프로젝트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건설 구간들은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의의를 감안할 때 시간적인 이유에서 기존의 계획 절차를 따를 수 없고 투자조치법에 의한 가장 신속한 건설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투자조치법의 범주에서 입법자들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나 건설 구간에 대해 직접 허가를 내어 줄 수 있음. 1991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투자완화 및 주택건설부지법은 도시건설 및 계획법, 유해물질방출법상의 허가, 지역 개발 절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등을 간소화 내지는 완화시키는 법적 기초가 되고 있음. 행정 분쟁 과정에서의 법적 구제는 동독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건설법과 자연 보호를 조화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졌음.
- 주택 건설 부문에 있어 구부채(Alt-Schulden) 문제의 해결: 연대 협약에 의해 구부채 문제가 해결됨. 1평방미터당 150 마르크씩 탕감하여 총 310억 마르크에 이르는 탕감액은 “구채무변제기금(Erblastenfonds)”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이자 지원(94년 47억 마르크, 95년 23.5억 마르크)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함.
- 환경 오염은 더 이상 민영화의 장애물이 아님: “환경 오염 잔재”라는 투자 장애 요인의 제거와 일자리의 보존 및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신탁청과 동독 지역 주정부들은 기업 취득자가 환경오염 잔재를 수용

하지 않을 경우 각각 60%, 40% 비용을 분담하고 있음. 대형 프로젝트(예를 들면 갈탄 기업이나 대형 화학업체)의 경우에는 신탁청과 동독주들의 비용 부담은 75%와 25%로 확정되었음(이에 대해서는 제 5장 VIII 부분 참조).

2.5 사회 간접 시설⁷⁾의 확충

“동독 부흥” 전략의 또 다른 받침목을 형성하는 것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이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없이 경쟁력있는 서비스업 및 산업 입지를 형성하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수백억 마르크에 이르는 광범위한 투자를 실시, 운송(제 5장 V 1 부분 참조), 우편 및 통신(제 5장 V 2), 환경 보호(제 5장 V 3), 도시 건설 및 지역 개발(제 5장 V 4), 교육(제 6장 I), 학문 및 연구(제 6장 II, III)등과 그에 상응하는 개발 조치들을 지원해왔다.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작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중간 결산해 보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또 서독과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이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1인당 동서독 양지역의 공공 부문 투자를 비교해 보면, 동독이 서독보다 1992년에는 20%, 1993년에는 30%를 초과했다.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의 속도와 역동성이 이같은 정도로 계속된다면, 동독 지역은 가까운 장래에 최고로 현대적인 사회 간접 시설을 갖춘 산업 입지로 변모될 것이다.

7) 역주: 사회 간접 시설(Infrastructure) - 상부 구조를 받쳐 주는 하부 구조를 의미함. 경제에서는 도로, 통신, 항만 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움직임을 받쳐 주는 사회 제도까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

연방정부가 라이프찌히 전시장(展示場)에 3억 마르크 상당의 초기금융을 지원한 결과 전통이 풍부한 이 상업 도시 라이프찌히는 동서(東西)무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통신 부문도 1997년에는 서독 수준의 설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사회 간접 시설 부문에서는 부분적으로는 투자의 성숙 기간이 명백히 더 길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가 당장 나타나기 힘들다. 특히 교통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 계획 및 허가 절차를 단축한다 하더라도 이같은 프로젝트가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데는 보다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한된 공공 재원과 동독 지역의 수용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바람직한 일들이 한꺼번에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초기부터 민간의 지식과 자본을 효율적인 사회 간접 시설 확충 작업에 끌어들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간의 지식과 자본을 활용하는 일은 공공 재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외에도 사회 간접 시설 투자를 가속화하고, 공공 부문의 과제를 효과적이고 저비용을 들여 완수하며, 공공 과제의 실천에 있어서의 경쟁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활동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부문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 재원의 조달”이라는 정부 부처내 해당 부서 작업팀의 제안들은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팀의 중간 보고서가 1992년 1월 29일 내각에서 다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연방정부는 교통부문에 있어 시범 프로젝트에 동의했고, 각 부서에 관할구역내의 작업을 공공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 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용하여 속행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사회 간접 시설을 민영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주와 지방 자치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정보 보고서 작성 및 행사 개최, 환경 사회간접시설 부문에서의 시범 프로젝트, 시범적인 계약에 대한 처리, 상수/하수도 부문, 쓰레기, 근거리 교통 및 공공 계획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가이드 제시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활

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2.6 구동독 기업의 판로 지원

“동독 부흥”의 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은 판매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다. 동독 시장의 개방, 전통적인 판매 관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구공산권 국가로의 수출 격감은 화폐 및 경제 통합의 발효 직후부터 이미 심각한 판매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대외 무역과 내독 교역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부록 Nr. 101-104 표 참조).

이에 따라 동독 기업의 판매 기회를 강화시키고 안정화하는 작업은 동독 부흥에 초점을 맞춘 연방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다. 초기의 국가 지원은 구 소련시장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 특히 헤르메스 수출보증을 통해(이에 대해서는 제 5장 IV 10) 역점을 두었지만 - 동독의 교역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었다.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 경제적 변혁 상황 - 특히 러시아 연방에 있어서의 - 을 감안하면 가까운 장래에 구공산권으로 구동독의 교역이 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동독 기업들은 중동부 유럽과의 전통적인 교역 관계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서방 시장을 겨냥한 변신의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1992년 9월 23일 내각 결의와 더불어 동독 기업의 이같은 변신 노력을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의결했다.

정부 조치들 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이 있다:

- 동독기업들의 서방 시장 적응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연방의 공공 수주 발주시 동독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선권 강화, 동독 기업의 판매, 마케팅, 혁신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몇몇 해외무역사무소와 특정 부문의 상품 소개 등과 같은 협력을 통한 판매 지원, 동독기업의 서방 수출시 헤르메스 수출 보증의 신축성 있는 운용, 그

리고 서독 경제의 동독 상품에 대한 판매 이니셔티브 등을 들 수 있음.

- 단기적으로 구소련 시장으로부터의 주문 확보를 위해 사안별 검토를 통한 헤르메스 보증의 제공, 교역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구소련 천연 자원의 개발 등 모든 가능성의 활용
- 서방 시장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는 목적으로 신탁청 산하 기업들의 구조조정 및 현대화

이같은 조치들은 1993년 7월 13일 내각 결의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1994년 및 1995년에 대해 각각 5,500만 마르크의 추가 재정이 확보되었는데, 중점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동독 기업의 국내외 상품전시회 참가
- 마케팅 전략의 마련과 품질 안전 시스템의 확충
- 해외 무역사무소등을 통한 판촉 활동

이외에도 EKH(자기자본지원)-프로그램 및 공공 수주제도를 활용하여 동독 상품의 판매 기회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2.7 노동시장 정책 및 지역정책을 통한 지원

마지막으로 “동독 부흥” 전략은 경제적인 구조 조정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노동시장 정책 및 지역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이같은 지원은 상당한 정도의 고용 및 생산 손실을 수반하는 동독지역의 구조 조정 과정을 감안하면 특히나 필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정책의 과제는 생산력이 있는 새로운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가교(架橋)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은 연방 정부의 대량 지원

을 받은 민간 투자활동이 광범위하게 효력을 발생하고 수익성이 없는 낡은 일자리들의 철폐로 인한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동독 주민들이 이같은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채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 이후부터 상당한 규모의 고용 창출 조치(ABM), 직업 재훈련 조치, 조기 연금 규정 및 조기 퇴직 규정 등(제 5장 IV 참조)을 도입했다.

“지역 지원 조치”의 일환으로는 특히 대형 기업 단위의 재정비 또는 가동 중단등으로 대량의 고용 감축이 발생한 문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연방과 주들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적인 차원의 경제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 지역들을 지원해왔다.

2.8 독일 전체 경제의 역동성 회복

연방 정부의 전체적인 구상속에서 진행되는 개별 전략 요인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간과해서는 안될 한가지 사항은 “동독 부흥” 전략의 성공이 서독 국민 경제의 효율성과 안전성 보존과 직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동독 경제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왜냐하면 독일 전체 경제의 역동성이 회복되어야만 앞으로 수년간 실시되어야 될 공공 재정 이전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독 기업의 판매 기회가 개선되고 동독에 투자활동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신탁청에 의한 기업의 민영화 및 정비

구동독이 아직 모드로 정부의 치하에 있던 1990년 3월 1일, 동독 각료평의회는 우선 “인민공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신탁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1990년 6월 17일자, 동독 신탁법에 의거 신탁청은 기업민영화의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통일조약 제25조를 통해 실체가 인정됨으로써 신연방주

의 경제전환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적·정치적 핵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탁청에게 주어진 임무는 신탁청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국가의 기업활동을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한 신속하고 광범하게 전환시킨다. 대다수의 기업체로 하여금 가능한한 경쟁력이 갖추어지도록 하여 일자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목적에 위한 토지를 마련한다.”

애당초 신탁청은 불충분한 인력과 열악한 여건하에서 이와 같이 방대한 임무에 착수할 수 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패와 함께 엄청난 후유증이 남아있게 되었으며 게다가 기업의 시장경제 전환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1일자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더불어 구동독지역 기업체는 막대한 생산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상태에 직접 돌입하게 되었다.

기업에게 전통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던 동구권 판로, 특히 소련의 판로가 COMECON 체제의 해체와 함께 대부분 붕괴되었다.

수십년간이나 결핍경제상태에 처해있던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수요는 직접 접하게 된 서독생산품에 집중적으로 쏠리게 되어 구동독지역 자체의 생산품을 소홀히 하였다.

수요구조의 이와같은 변화는 수많은 제조업 및 농경분야의 기업체에게 엄청난 판로문제를 야기시켰다, 이외에도 특히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증가는 효율성증가 및 자재 비용절감을 통해 보완될 수 없었다.

나아가 토지의 불분명한 소유권 관계, 환경오염잔재 처리문제, 아직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 공공행정 등이 신탁청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신탁청은 수많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재빠르게 양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991년 중반, 불과 9개월 동안에 신탁청은 소매상, 소규모 호텔, 요식업체, 영화관 등 무려 15,000 건수를 매각하는 “소규모 민영화”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서독지역 중소기업에 의한 대단위 쇼핑센터 건립을 필두로 하여 신연방주의 기업창립활동이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1993년 6월 말까지 과거의 인민공유기업 및 Kombinat의 민영화를 통해 무려 12,500개의 기업체, 공장, 공장의 일부가 매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140만의 일자리와 1,800억 DM 이상의 투자가 확보될 수 있었다.

이토록 방대한 신탁청의 민영화 성과는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끊임없는 확충에 따른 결과이다:

- 중소기업육성 (기업내부 경영인 발굴 및 기업외부 경영인 초빙을 위한 특혜조건, 신탁청과 무관한 자문역 동원, 금융궤박상태 극복을 위한 단기금융, 상업조직의 민영화 등)
- Kombinat의 해체분할, 해체분할된 기업일부의 민영화
- 반환문제의 해결, 공장설치장소의 재활용, 생태학적 오염잔재배제, 민영화계약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한 투자장애요인의 제거
- 정기적인 산업부문별 공시 및 홍보책자를 통한 기업입찰 (최소규모 기업체)
- 투자은행과 투자상담역의 활용, 적극적인 외국고객 유치
- 기업의 청산과 민영화 분리
- 재민영화, 지방자치단체 소유화

신탁청은 이와 같은 민영화 정책을 속행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최고의 전제조건인 바, 그 이유는 새로운 인수자는 통상 유능한 경영인, 매력적인 생산품, 생산 노우하우, 시장, 고용, 투자, 책임감있는 경영방안 등을 신연방주의 기업에 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민영화는 대대적인 기업정비조치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속행되고 있으며 기업정비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함께 추진된다.

- DM 개시 대차대조표의 확정범위내에서 산업부문별 기준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확보 (대부분 구채탕감 및 차액보상청구의 취하를 통합)
- 기업체가 지불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유동성 융자금 대출, 수출용 융자금의 대출, 사회복지 관련 목적성 지원금 지원조치
- 생산과 시장에 관계되는 신탁청의 신규투자 가능성 제공. 따라서 기업정비용 재원은 기업의 현대화, 생산성 제고, 경쟁력 구비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투자로서 집중화되어야 함.

첫번째 조치가 대차대조표의 확정과 더불어 대부분 완료된 반면, 유동성 재원조달 및 기업운영을 위한 재원조달과 같은 조치는 각 산업분야의 경영진이 개별 사안마다 내리는 결정을 기초로 하여 추진될 영구적 과제이다.

신탁청의 또 다른 기업정비방안은 곧 투자용 재원조달의 강화이다. 이와 같은 투자강화는 구서독지역 경쟁업체들과 비교할 때 구동독지역 기업체에 대한 형식상의 평준화가 적정한 자기자본 형성과 더불어 달성되기는 하였지만, 결국 막중한 시장위험부담으로부터 야기되는 생산력 감소상태가 여전하므로 필요한 것이다. 신탁청 산하기업이 동구지역 시장에서 갖고 있는 장점이 수요자의 지불능력 부재로 인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서구 시장을 겨냥한 방향전환에는 (생산혁신, 새로운 유통망 구축, 아직도 시장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상태 등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기업체는 CIS 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구조전환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기업정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정비는 신탁청 자체에 의해 추진될 수 없고 현장의 기업체가 자체적 방안 및 대대적인 자체책임 (간사회, 이사회/경영진, 외부 자문역)을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신탁청으로부터 생산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진 기업운영 방안이 관철되기 위하여서는 경영진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 그 동안에도 민영화시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기업정비의 성과는 경영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경영지원조치 (감사역 및 이사진/ 경영진에 최고 경영자 투입, 신탁청을 통한 최고경영인의 선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외에 신축적인 고용계약, 상공회의소와 협회간의 상호협력, 자문역과 한시성 경영인의 채용, 자매관계, 구동독지역 출신 경영인의 육성, 제2선 및 제3선에 이르는 경영진의 강화 등이 중요하다. 나아가 기업내 연수교육 역시 자체주도 및 조직을 통해 기업경영을 위한 전문지식 배양에 기여해야 한다.

기존 판매시장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서구시장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9월 23일, 대동구권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체로 하여금 서구시장을 겨냥한 구조개편과 방향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판로를 안정시키는 일련의 대책을 결정하였다 (Hermes 수출보증보험제도의 신축적 운용, 동구권 및 CIS의 각종 프로젝트를 위한 구동독지역 기업체의 수출에 대한 저리 융자금 제공, 구동독지역 기업체를 위한 공공발주의 강화, 대외무역 촉진장치의 개선 등).

신탁청은 신탁청 산하기업체가 잠재적 발주자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 편지를 보내 사안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승인된 대차대조표 및 사업보고서가 홍보용으로 활용된다.

신탁청은 민영화에 앞서 정비가 되어야 하는 기업체의 경영참여식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영합자회사 (Management KG) 모델을 개발해 놓았

는 바, 현재 5개가 설립되어 있다. 이 경영합자회사는 새로운 Konzern을 형성하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다. 기업경영방안은 그 실현가능성을 부단히 검토하지만, 기업의 존속이나 고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능력이 있는 기업체가 경영합자회사의 모델을 통해 경영참여식의 운영이 성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청이 개별정비와 같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와 같은 것은 대체로 대규모 기업에게 적용된다.

신탁청은 정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가 민영화될 때까지 필요한 재정지원은 물론 구조변경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 기업경영방안은 원칙적으로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검토하며 개별 사안별로 확정된다. 지역정책적으로나 구조정책적으로 의의가 큰 기업을 정비할 경우 신탁청은 지역정책 및 구조정책을 책임맡고 있는 신연방주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한다.

각 주와의 합의사항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정부는 경제계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업의 지역적 의의를 정의내린다.
- 신탁청은 기업의 정비능력을 판단하고 최종결정을 내린다.
- 정비능력이 있는 기업체는 신탁청과 주정부로부터 공동지원된다. 즉 주정부는 이와 같은 기업체에게 구조정책적, 지역정책적 촉진가능성을 보증한다 (특히 구동독지역 재건 공동대응책의 재원 및 주정부 보증을 포함). 나아가 주정부는 노동시장정책 및 인프라스트럭처 정책과 관련된 조치를 통해 구조변환에 따르는 문제점을 완화시킨다.

1992년 말까지 신탁청은 (구채 인수, 재정지원, 융자, 보증 등) 산하기업의 정비를 위해 이미 1,200억 DM을 지출하였다. 신탁청은 산업핵심지역의 유지 및 혁신과 기업정비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

다.

1993년도 연간경제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신탁청이 1992년 12월 8일 제출한 방안을 기초로 하여 민영화와 정비를 통해 산업핵심지대를 계속 보전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혔다. 연대협약을 논의했을 때 이러한 방침과 더불어 추진되는 기업정비대책의 핵심이 수용되었으며, 연방 재정건실화 프로그램에서 재정적 문제가 실현되었다.

- 생태학적 환경오염의 잔재를 제거하고 산업핵심지대의 확보 및 혁신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경주되도록 한다.
- 이와같은 목표설정과 더불어 신탁청의 재정차입한도를 확대시킨다. 1993년도 및 1994년도 총 차입액은 각각 300억 DM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적 확대조치는 해당기업이 우수한 경영을 통해 필요한 정비조치를 착수하고 관철할 때에만 고려될 수 있다.

신탁청은 산하의 경영참여식 기업체에게 적절한 경영방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다. 경영인의 한시적 고용 및 대대적인 연수교육 등이 경영능력 개선을 위한 요소의 일부이기도 하다.

기업의 판로, 비용절감 및 혁신능력은 기업정비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전술한 바 있는 1992년 9월 23일자 각의 결정에서 함께 판로를 촉진하고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한 효율적 대책을 가동시켰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연방의 발주담당 부서가 2년 동안 신연방주로부터의 구입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자체적 의무, 신연방주에 높은 고용효과가 따르는 투자계획을 위한 신탁청의 자원조달 모델, 정당한 근거가 제시되는 개별사안에 따라 기존 수출보증 또는 Hermes 보증에 의한 통상한도를 초월한 대동구무역 보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신연방주의 산업구조가 보전되고 확충되어 미래에 결실을 맺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는 물

론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감있게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4. 구동독지역 산업의 혁신

4.1 통일이전의 상황

현대 서방 산업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동독의 공업 부문은 너무 비대해 있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생산업(Produzierende Gewerbe: 제조업, 에너지 공급 및 수자원 공급, 광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건설업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8년 65%(당시 서독은 34%)였다. 이같은 비율은 정치적으로 설정된 가격이 그 정산 과정에 산입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독에서 공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988년 동독에서는 취업자의 45%가 바로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참고로 1988년 서독의 생산업 종사인구는 서독 취업자의 33.6%였음).

공업 부문의 비대화, 그리고 동 부문 종사기업들의 높은 잠재실업율 외에도 동독의 산업은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 세계 시장으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대부분의 필요한 투자재와 선급부하 (Vorleistung)가 국내 생산에 의해 충족되어야 했음. 또 동독 기업들간에도 분업(分業)의 잇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았음. 오히려 동독 기업들은 지속적인 공급 병목현상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수준의 부품자급도를 유지하면서 생산을 해 왔음.
- 취업자당 GDP를 기준으로 한 생산성은 서독에 비해 아주 낮은 수

준에 있어 서독 수준의 30% 정도에 겨우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상당한 수리를 통해서만 가동될 수 있는 낡은 시설이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았음. 산업 시설의 교체율(摘出率: sorting out rate)은 연간 겨우 1%에 불과.
- 여러 생산 시설이 보건 및 환경 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이미 가동 중단되어야 했는데, 이는 특히 기초화학, 야금(冶金), 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심했음.
- 수출, 그중에서도 특히 기계 및 차량생산, 전자공학 등 투자재 생산 부문은 물론 섬유, 의류등의 수출은 주로 구 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정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 동독 전체 수출에서 구공산권 국가들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65%에 이르렀음.

산업구조는 자급 경제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집권 경제 및 코메콘 내에서의 분업의 결과였고, 여기에는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시 되었다.

4.2 1990년 이후의 발전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의 결과 동독의 산업은 오늘날 동독 경제부흥에 있어 문제아(問題兒)가 되고 있다. 현재 동독 산업의 생산은 1990년 중반 수준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은 1/3로 줄어들었다. 제조업이 동독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로 여전히 서독보다 1.5배 이상 높은 상태에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생산업의 확장은 주로 건설업 및 건설 관련 업종에 기인한 것이다. 건설업의 고용 상황은 안정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1992년 건축부분 투자는 1991년에 비해 약 1/3 정도 늘어났다.

건설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종목은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 건설부문이다. 그러나 상업용 건축과 아주 저수준의 상태에서 출발한 주택 건설도 점점 중요성을 얻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은 전체적으로는 후퇴를 보인 것은 아니나 - 계절에 따른 영향들을 감안한다면 - 아직 명확히 확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수주 상황을 보아도 그같은 추세가 엇보이지 않는다.

과거 코메콘 국가들과의 교역 붕괴로 동구지역으로의 수출이 대폭적으로 줄어 들어 있는데 이어, 이제는 서독 지역의 경기도 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 시장으로의 진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새로운 판매 기회를 찾아내는 작업은 신탁청 산하 기업은 물론 이미 민영화된 동독 기업들에게도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동독의 제조업은 전체적으로는 침체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 보면 다양한 양상을 보여 준다. 그중에는 이미 얼마 전부터 팽창을 보이는 몇몇 부문도 있다. 그같은 업종으로는 주로 민간 또는 공공 부문의 건축활동에 관련된 업종들과 현지 민간소비로 이익을 누리는 업종들을 들 수 있다. 석재(石材) 및 토재(土材) 산업, 일부 전자 산업, 인쇄업, 합성수지 가공산업 그리고 일부 식품업이 여기에 속한다. 철강 산업 및 경금속 산업도 상대적으로 호황(好況)을 누리고 있는 편인데, 이는 건설 부문의 수요 활성화뿐만 아니라 구소련 국가들로부터의 철도 차량 수주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이에 비해 화학 산업이나 기계제조업같은 다른 중요한 산업 부문들의 생산은 점점 감소를 보이고 있다.

화학 산업(석유, 고무 및 합성수지 가공은 제외)의 생산은 1992년 4/4분기 중 1990년 하반기의 60% 수준에 이르렀다. 1992년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10억 마르크 증가한 67억 마르크를 기록했다. 동 산업 종사자수는 1989년 약 18만명에서 1992년말에는 약 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기계 제조업의 1992년 4/4분기 생산은 1990년 하반기의 약 1/3 수준이었

다. 동 산업 종사자수는 1990년 약 44만명에서 1992년말에는 약 1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동독 산업은 구조면에서 크게 변모했다. 이중 두드러진 현상은 투자재(投資財) 생산업이 그 중요성을 크게 상실했다는 점이다. 1990년 하반기중 투자재 생산업은 전체 산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1992년 하반기에는 1/5로 줄어들었다. 이중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기계 제조업으로, 동 부문은 이전에는 동독 산업중 타 업종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업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식품 산업 및 기호품 산업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독의 식품 산업 및 기호품 산업은 1992년말 1990년 하반기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였다. 동 산업부문 종사자 수는 1989년 약 26만명에서 1992년말에는 7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동독 생필품들은 점차 그 품질과 포장 수준을 서구 수준에 맞추어갔고, 그 결과 소매점에서의 동독 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였다.

아직 신탁청 산하에 있는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공업 부문의 기업들이다. 동 부문 기업들은 기업수에서 보면 신탁청 산하 기업의 2/3, 종사자 수에서 보면 신탁청 산하 기업 총 고용수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동독 산업에서 신탁청 산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상당한 정도이지만, 그러나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1992년 신탁청 산하 기업들에는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약 절반이 있었으나, 1993년 2월 현재는 약 1/3로 줄어들었다.

개별 경제부문별(생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상세한 개관은 부록 Nr. 105-143를 참조할 것.

4.3 동독 산업의 문제점과 전망

동독 산업의 향후의 발전은 동독 기업들이 얼마만큼 국제경쟁력을 갖추

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경쟁이 심한 판매시장 진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생산품의 품질과 가격, 그리고 생산코스트를 들 수 있다.

동독 기업들은 그동안 특히 고용의 대폭 감축에 힘입어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 동독 산업체의 생산성은 1991년초부터 1992년 말 기간중 약 두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동 기간중 시간당 임금을, 즉 고용 시간당 평균 임금과 봉급도 동일한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생산 부문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위당 임금비용(Lohnstückkosten) - 순생산에서 임금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율 - 는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즉 1993년말 기준으로 보면 단위임금 코스트는 1992년초보다 10% 줄어드는데 그쳤다. 따라서 임금코스트가 동독 산업에 주는 부담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 동독의 단위임금 코스트는 여전히 서독보다 두배나 높은 수준에 있다. 몇몇 부문에서는 심지어 임금코스트 부담이 늘어나기도 했는데, 특이한 점은 특히 신탁청 산하 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부문들은 생산은 계속 감소를 보였으나, 고용은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줄어들지 않았다.

동독 기업들의 단위 임금 코스트가 여전히 서독기업들보다 대폭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독 기업들은 올해에도 대량 해고 조치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신탁청 기업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는 현수준의 고용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경쟁력이 뒤져 있다.

국제 경쟁에서의 비용 압박과 기업 전략의 구사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 이같은 과정은 기업의 연구 개발 잠재력을 급격히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동독 산업체 연구부문 종사자 수는 1989

년 말 8만 7,000명에서 1992년말에는 2만 4,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독산업의 생산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동독 수출의 격감은 점차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건설 활동은 계속되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힘입어 계속 강력한 증가를 보일 것이다. 경제부문의 건축 투자도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주택 건설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고용 감축은 올해중 점차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독 산업에 현재 요구되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조정 작업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장애 요인은 바로 임금 인상 추세와 생산성 증가추세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독 지역의 경제 침체로 동독 기업의 생존에 필수적인 방향 전환인 이른바 서독 시장으로의 판매시장 전환 작업이 난관을 겪으면 겪을 수록 동독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 기업들보다 더 높은 단위당 임금비용으로 인해 실패를 겪게 될 위험이 더욱 크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와 관련해, 또한 특히 고 임금 압박을 구실로 연구 개발비 투자를 줄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 비용과 관련한 경쟁력 외에도 세계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동독 기업의 성공에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5.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5.1 통일 이전의 상황

다양한 구조를 지닌 소규모 또는 중간 크기의 수많은 기업들을 총칭하는 중소기업은 시장 경제의 중요한 뼈대요 원동력의 하나이다. 1989년 중소기업

업 구조 확충을 위한 출발 상황은 아주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 한때 약 1만 1,800개에 이르던 구동독 소재 중소기업들은 이미 1972년에 국유화되었고, 그후 1989년까지 더 이상 민간의 기초 위에서 발전할 기회가 없었다. 전체 경제는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되었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콤비나트들의 구조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자영업은 단지 10만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것도 대부분이 수공업, 판매업 및接客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연방주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은 처음부터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다. 연방 정부의 정책 목표는 동독 지역에도 공업, 수공업, 판매업,接客업, 기타 서비스업 그리고 자유업(Freie Berufe) 부문에 있어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구조의 기초가 되는 폭넓은 층의 효율적인 중소기업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같은 연방 정부의 정책은 세가지 지주(支柱), 즉 창업(創業), 1972년 국유화된 기업을 구소유주에게 재반환하는 재(再)민영화(Reprivatisierung) 그리고 신탁청에 의한 구 인민소유 기업의 민영화(民營化), 이 세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법제도 및 세제(稅制), 상공업 회의소 및 업종별 단체들의 조직, 우수한 기능을 갖춘 은행 제도, 능률적인 공공 행정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 간접 시설 등이다.

5.2 1990년 이후의 발전

초기의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중소기업 확충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90년 이후 기업 등록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1990년과 1991년에는 그 수가 각각 28만 1,000건, 29만 3,000건에 달해 최고조에 이르렀다. 1992년의 기업등록수는 21만 4,000건이었다. 1990년부터 1993년 7월말까지 총 90만 2,790건의 기업신규등록이 있었으며, 같은 기간중 31만 7,861건의 등록 취소가 있어, 동 기간중 순수한 사업자 등록 증가는 58만 4,929건이었다(부록 Nr. 144-150 표 참조). 그 사이 1993년 7월까지 창업신고를 한 기업들중 36만개의 중소 자영업체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독 지역에는 자영업체를 포함, 약 41만의 자영업자들(self-employed person)이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2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년간의 기간동안 달성한 성과들을 보던,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독립적인 기업활동의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활용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5.3 지원 조치

연방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 과제는 목적이 분명한 지원 조치를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및 자유업자들이 뿌리를 내려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독의 경제 부문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중요한 조치로는 창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기업의 현대화 투자 및 기업 상담 지원, 정보 제공 및 직업 교육, 동독 상품 판매 지원 등이 있다.

연방 정부의 창업 및 기업 안정화 지원 조치는 현재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투자 물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창업의 절반 정도는 공공 재원의 지원을 받았다. 연방 정부의 두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인 자기자본지원(EKH)-프로그램 및 ERP-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993년 6월말까지 15만개의 창업 기업들과 6만개의 기존 기업에 총 370억 마르크의 저리(低利) 융자가 실시되었다. 이 두가지 프로그램은 - 새로운 경제적인 요구를 반영하면서 - 1993년 이후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5.4 민영화 및 재(再)민영화⁸⁾

신탁청은 중소기업 중심의 민영화 및 재민영화 작업을 통해 동독 지역에 있어 새로운 중소기업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과거 구동독 시절 소유권을 박탈당한 기업들을 재산법(Vermögensgesetz)에 따라 재반환하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신탁청은 이같은 재

8) 역주: 기업의 재(再)민영화(Reprivatisierung)란 과거 인민 재산에 속한 국영 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일반 민영화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과거에 소유권을 박탈당한 기업가에게 다시 그 기업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산 원상회복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재(再)민영화가 신탁청의 우호적인 협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민영화된 기업의 약 2/3는 중소기업이었다. 이중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인수(Management-Buy-Out)에 의한 민영화율은 19% 정도였다. 1993년 6월말 현재 1,688개 기업, 29만 6,343명의 종업원이 아직 신탁청 소유로 있는데, 이중 94%가 5백인 이하의 기업이므로 아직 많은 수의 중소기업이 생겨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1972년 국유화된 약 1만 1,800개의 기업이 현재 재(再)민영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업들중 75%는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이다. 1993년 6월말 현재 총 7,976개 기업의 재민영화 작업이 완결되었다. 이로써 재산법에 의거한 기업 전체 또는 일부의 원상 회복 신청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판결이 내려졌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신청건들 중에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중소기업 창업이 기대되고 있다.

5.5 각 산업 부문에서의 중소기업의 발전

중소기업 창업의 과정에서 경제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작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또 균형이 잘 잡힌 상태도 아니다. 판매업, 수공업, 서비스업, 호텔 및接客업 그리고 일부 자유업의 중소기업들이 주종을 이룬 반면, 산업 부문의 중소기업 창업은 아직 미진한 상태여서 그 격차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창업을 통해 생겨난 동독 지역 각 경제 부문의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발전 경향을 보이고 있다.

5.5.1 수공업

수공업은 동독 지역에서 팽창적인 경제 부문에 속한다. 1989년 당시 동독에는 8만 5,390개의 수공업체들(2,718개의 수공업 생산 조합(PGH) 포함)이

있었고, 42만 7,000명이 이 부문에 종사했다(이중 16만 3,700명은 PGH 소속이었음). 업체수 및 종사자 수를 보면 건축 부문 수공업(building trades), 자동차 부문 수공업, 목공소, 이발소 등이 가장 규모가 컸다.

수공업 부문은 지난 3년간 구동독 지역의 시장 경제적 구조를 확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다. 1993년 6월말까지 동 부문 업체수는 1989년에 비해 3만 2,000개(37%)가 늘어난 11만 7,000개에 달했다. 종사자 수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독일 수공업 중앙협회에 따르면 1993년 6월말 현재 동독 지역 수공업 부문에는 79만 5,0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1989년말보다 42만 3,000명이 더 늘어난 숫자이다. 직업훈련자의 수도 1990년 3만 2,056명에서 1991년에는 6만 7,233명, 1992년에는 9만 3,83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직업 훈련의 성과가 상당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동독 지역의 동 경제부문은 이미 이같은 만족스러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연방주간의 평균 밀도가 서독 지역의 수준에 이르려면 아직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발전 추세를 볼 때 건축 및 실내장식 부문, 자동차 부문, 전자 산업 부문의 수공업이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류 부문 수공업과 하청업체와 같은 몇몇 부문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구조 조정 작업이 업체들의 매출상황 및 수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5.5.2 공업 부문의 중소기업

이 분야의 중소기업은 다른 경제부문의 업체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복잡한 초기 투자, 뚜렷이 높아진 시장 진출 장벽, 불명확한 소유권 관계 그리고 대형 업체의 허약한 기반 등으로 인한 것이다.

서독 지역에는 약 10만개의 공업 부문 중소기업이 건재한 반면 동독지역에는 이제 약 8,500개의 중소기업이 생겨나 그 격차가 심하다. 민영화, 재(再)민영화, 기존의 중소 기업과 창업에 의한 새로운 작업장 설립 - 이는 특히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연방의 중요한 지원조치들의 실시와 연관된 것임 - 그리고 노하우 이전의 개선 등은 산업 부문의 중소 기업의 계속적인 확충을 지원해주고 있다.

5.5.3 서비스업

서비스업 부문에는 그 사이 수많은 중소 기업들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기업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동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 작업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판매업, 운수업, 관광업 부문의 합리화는 이같은 구조 변화의 추세를 보여 준다.

동 부문 중소기업중 은행업 및 보험업의 경우에만 종사자 수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업 부문은 동독의 경제 상황이 안정화되면 가장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경제부문 중 하나이다.

5.5.4 판매업

동독의 판매업은 화폐 및 경제 통합 이후 기간 동안 다른 경제부문에 비해 구조면에 있어 특히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부록 Nr. 151-152 표 참조). 신탁청에 의한 민영화와 판매업 부문의 창업으로 동독 지역에는 새로운 판매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생겨났다. 이미 구동독 시절부터 있어 온 2만여개의 자영업체들 외에 12만개 내지 14만개의 판매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래 지역적인 차원의 물품 공급을 담당한 소비 조합(Konsumgenossenschaft)들은 경제 및 화폐 통합의 결과 상당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했으며, 수천의 생필품점들을 단기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생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들에는 생필품 공급이 질적인 면, 상품의

종류면에서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기동성 있는 공급 조치와 이웃 지역의 지원, 그리고 새로운 공급 형태 및 판매점의 도입을 통해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을 피할 수 있었다.

서독의 판매 조직들은 구 HO-판매점들을 사들이고 소비 조합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동독 지역에 자체 판매망을 강력하게 확충해 나갔다.

소비자들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동독 도심(都心)들의 재(再)민영화 작업과 맞물려 동독에서도 전문 소매점은 새로운 틈새 시장이요 개발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부상했다.

기존 판매업체들의 구조 변화, 신규 판매업체들의 창업 그리고 서독 판매 기업들의 대규모 동독 지역 진출로 인해 동독지역의 주민 1인당 상업 부지의 크기는 그 사이 두배로 늘어났다.

소비재 도매업과 생산 관련 판매업체들도 소매업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은 전적으로 대형 도매업에서 다중적인 기능을 하는 기업들 기업들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을 갖추는 방식으로 확대·변화를 겪었다는 점이다.

특히 생산 관련 판매업 부문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이미 효율적인 도매 업체들이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동독의 도매업은 동독 상품 판매의 중재자 기능은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동독 산업의 안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자립적인 동독 토착의 도매업체 설립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성숙되어 있지 않다. 한편 유럽 공동체 시장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도매업체 또는 신규 도매업체들은 모든 기능과 형태에 있어 현대적인 판매 시스템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5.5 관광업

관광업 부문에서도 시장경제적인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일련의 특

별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동독은 기존의 자연적인, 문화 역사적인 잠재력으로 인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비교적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1990년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았던 광범위한接客업 및 숙박업 시설의 대부분은 질적인 면에서, 또 많은 경우 입지상 새로운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도시지역의 소형 호텔들과 숙박업소들의 민영화 작업은 1991년말까지 완결될 수 있었으나, 휴가 지역의 많은 업체들의 민영화는 아직 충분한 정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은 1993년중 거의 완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되면 시장성이 있는接客업 및 숙박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의 수중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향후 관광업 부문의 개발은 도시 지역과 부분적으로는 아직 미개발되었으나 매력이 있는 동독의 관광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

동독의 관광 상품을 매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수준의 관광 수요를 유발할 만큼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마케팅, 서비스 중심의 업체 운영 그리고 보다 매력이 있는 관광 개발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5.6 자유업

자유업(Freie Berufe) 부문에 있어 동독의 시장경제 구조의 확충 작업은 특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과거 동독에서의 자유업은 경제적으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1989년 약 1만 5,700명의 자유업 종사자(예술가와 신문기자가 포함)가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따라서 자유업의 확충 작업은 거의 아무 것도 없는데서 시작되었다. 자유업에 중요한 법적 제도들, 직업 회의소(Berufskammer), 직종별 단체, 지역별 단체의 확충 작업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1992년말까지 거의 완결되어, 이를 통해 동 부문의 향

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경제부문은 그 사이 역동적으로 발전했다. 자유 직업가의 수는 이미 1990년에 1만 8,000명, 1991년에 약 5만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6만 7,000개의 자유업체에 약 15만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상업 차원 또는 민간 차원을 막론하고 자유업의 서비스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동 경제부문은 뚜렷한 고용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 산업 부문의 연구, 개발 및 혁신

6.1 통일 이전의 상황

경제부문에 있어 잘 갖추어진 연구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와 효율적인 연구 개발(Research & Development)은 동독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정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같은 잠재력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작업은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대부분 노후화된 구 콤비나트의 자본스톡들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같은 작업은 또한 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을 상당히 축소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구조 조정에 따른 이같은 갈등은 1990년말/1991년초 구 콤비나트에서 떨어져 나온 이른바 研究會社(Forschungs-GmbH)들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동독 경제 전체 연구 개발에서 이 연구 회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말 약 20%였으며, 현재는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들은 최근 2년간 대규모의 감원을 실시했다. 연방, 주정부 그리고 신탁청의 협조하에 이 연구회사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경영진을 발견하고 중요한 시설들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최근 인력감축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동독 경제의 연구개발부문 축소 추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연방 정부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보면 1992년말 현재 동독의 연구개발 부문에는 2만 4,00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계, 신탁청, 주정부, 연방 차원의 공동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 개발 부문의 확충 작업을 속행하는 것이다. 신탁청과 연방 정부는 기업 민영화와 재정비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동독의 각 주들은 지역 개발에 있어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들은 기업의 혁신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도 “연구와 기술(Forschung und Technologie)” 연방-주 위원회와 동 위원회 산하 작업팀인 “研究 會社(Forschungs-GmbH)”를 통해 동독의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효율적인 연구 개발 능력은 특히 기업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동서독 양 지역 경제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동독 기업들의 방향 전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독일의 연구집약적인 수출중 2.5%만이 동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2 연방 정부에 의한 지원

연방정부는 1990년 중반부터 일련의 지원 조치를 통해 동독 경제의 효율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 조치들은 동독 기업의 기술적인 경쟁력 제고, 산업 관련 연구개발 부문의 구조 조정, 혁신적인 창업 지원,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강화, 경제 관련 연구 개발 지원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제고하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지원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특정 기술부문의 연구 개발(R & D) 프로젝트를 통한 동독 기업과 경제관련 연구 개발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통일 이후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6억 2,500만 마르크 이상이 지출되었음.
- 산업체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 협력 지원. 1993년중 이를 위해 총 1억 7,000만 마르크가 지출됨. 1992년부터 지원재원의 일부가 동독 지역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1992년: 7,000만 마르크, 1993년: 4,500만 마르크).
-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에 따라 1992년 2억 마르크가 동독 산업체 연구 지원을 위해 추가로 마련되었음, “研究 會社”들, 구 과학원(AdW)에서 떨어져 나온 경제관련 子會社들 그리고 기업들의 약 880여개의 연구 개발(R & D)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음. 1993년에는 이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시장대비 산업체 연구와 구조변화 확충 작업”에 따른 1억 마르크, “동독 부흥지원(Aufbauhilfe Ost)”에 의한 1억 마르크의 지원 재원이 마련되었음.

연방 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창업 지원과 더불어 우량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종의 모델실험으로 기술중심의 기업(TOU) 설립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까지 135개 기술중심 기업체에 대해 1억 마르크 이상을 지원함.
- “기술 센터 및 창업 센터의 확충”(TZ)의 모델실험은 TOU 지원조치에 대한 보완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이 모델실험은 신생 기술기업을 위한 적절한 양육 구조 및 재원조달 구조의 확충을 위한 것임. 15개 TZ 확충작업과 10개 TZ 계획작업이 그 지원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0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연방 정부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해 또한 다음과 같은 지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동독 연구개발 인력 지원”(PFO)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재까지 1,400개의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해 지원금을 얻었는데, 1992년에는 4,800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 연구 개발 인력 확충 지원(ZFO)은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의 확충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재 약 660개 업체 2,070명에 이르는 연구 개발 종사원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3,200만 마르크가 지원되었음.
- 연방 정부는 수주 연구 및 개발(AFO/AWO)라는 두가지 조치를 통해 기업의 연구 개발 부문 수주(受注) 제공 및 획득 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 두가지 조치에 의해 1,420개 계획에 대해 총 1억 1,500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이 지원금을 통해 시작된 수주액은 2억 5,000만 마르크 이상임.
- 혁신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상품 및 생산 공정을 위한 연구 개발 3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현재까지 135개 프로젝트에 3억 5천만 마르크의 지원이 이루어짐.

경제관련 연구 개발 지원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과 더불어 동독 경제의 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술 이전 및 혁신지원 기관”(ATI)들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영상의 문제들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며 생산품 및 생산 공정의 혁신 준비, 실행 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1992년말 현재 동독 전역에 21개 ATI와 10개의 파견 부서가 설치되었음. 업종중심 또는 기술중심의 이전 센터들이 이 기관들의 활동을 보완해주고 있음. 1993년중 약 2,500만 마르크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음.

- “혁신 자문 부서”의 모델 시험을 통해 연방 정부는 동독 지역 상공 회의소 내에 혁신 자문 부서의 확충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0만 마르크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음.
- 기술 이전 지원을 위한 중요한 계기의 하나로 연방 정부는 또한 한 시적이며 시범적인 케이스로 이른바 시범센타를 운영하고 있음. 이것은 정보 부족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동독에서는 현재 9개의 시범센타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2,700만 마르크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 1992년 “기술중심의 견학 및 정보수집 프로그램”(TOP)이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현대적인 기술과 기업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소규모의 혁신 기업에 대한 지식 전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현재 40여개 기업들이 100여개의 TOP-견학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동독 기업 중 80%-90%가 연방정부의 경제 부문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연방 정부는 동독산업의 구조를 혁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1992년에만 해도 이를 위해 6억 1,000만 마르크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1993년에도 효율적인 동독지역 산업체 연구부문의 확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위해 총 6억 9,000만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이같은 노력의 성공 여부는 물론 경제계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7. 구동독 지역 에너지 산업의 구조 조정 및 확충

7.1 구동독 에너지 산업의 구조

과거 자급자족을 위한 동독 경제의 노력은 동독의 에너지 산업이 독점적인 구조와 경제적, 환경적으로 완전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는 결과를 낳았

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갈탄 중심의 일방적인 편향은 동독의 에너지 경제의 전체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동독에서 갈탄은 1차 에너지 소비의 70%, 전력 생산의 80%를 차지했었다.

약 2,250억 줄(Joule: 열량 단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동독은 주민 1인당 소비량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높은 국가들중 하나였다. 이같은 에너지 낭비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및 소비외에도 세계시장에 걸맞지 않은 에너지 가격과 특히 민간용 및 산업용 에너지가격에 대한 막대한 국가 지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과 더불어 구서독의 에너지, 환경 및 광업 부문의 법규들이 동독 지역에도 확대·적용되었다. 동독은 또한 에너지 정책 및 법규와 관련 유럽 공동체와 국제 에너지 기구의 세계 에너지 협약 체제에도 편입되었다.

동독 에너지 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구조조정을 위한 중요한 작업의 하나는 에너지 가격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1991년-199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지원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의 에너지 가격은 서독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 비용과 시장 상황을 기초로 결정되며, 가격 통제와 카르텔법에 따라 감독받고 있다.

통일 이후 에너지 소비의 규모와 구조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경제의 구조조정에 따라 생산이 격감하자 동독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갈탄은 공급부문의 55%(1992년)를 차지하여 여전히 그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석유와 지하가스가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동독의 에너지 경제에 관해서는 부록 Nr. 153-155 부분 표를 참조할 것)

7.2 구동독 갈탄 산업의 발전

80년대 말 라우지츠(Lausitz)와 중부 독일 지역에서의 갈탄 채굴은 연간

3억톤을 초과했으며, 1989년 말 당시 동 에너지 부문에는 13만 3,000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구조 조정 작업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1989년-1992년간 채굴량은 1억 2,900만톤으로 60% 감소를 보였다. 산업 부문의 급격한 위축 과정과 전환, 난방시장의 판매 격감 등이 채굴량 감소의 주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대량의 고용 감축이 있었고, 현재 4만명이 동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동 에너지 경제부문은 - 비록 그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합리화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몇년간은 인력 감축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성을 갖춘 몇몇 대형 채굴업체로의 통합, 채굴기술상 보다 유리한 탄광의 개발, 철저한 합리화 실시 및 현대적인 기술의 지속적인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동독의 갈탄 산업은 향후에도 전력 생산에 있어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탁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 갈탄지역에 있어 경쟁력 있는 탄광들의 매각 작업을 신속히 완료하는 것은 동독 갈탄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동독 갈탄산업 민영화를 위한 중요한 전제의 하나는 해당 주정부가 장기간을 소요하는 탄광 운영 계획에 대한 허가를 과단성있게 내어주는 것이다. 동독 갈탄지역의 주 수상들은 늦어도 1993년말까지 이같은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갈탄의 비효율적인 연소(燃燒)로 야기된 손상외에도 무분별한 갈탄 채굴, 필요한 재 순화(純化) 작업(Rekultivierung)의 소홀로 인해 동독 지역에는 상당한 환경 오염이 야기되었다. 재 순화(純化) 조치(Rekultivierung)없는 채굴 작업을 통해 생겨난 환경 오염을 제거하는데는 수백억 마르크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구 환경 오염(Altlasten)의 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방 정부와 동독의 주들은 1992년 10월, 1993년-1997년간 갈탄 분야에만 매년 15억 마르크를 투입한다는 구 환경 오염에 관한 재원 조달에 합의했다. 이로써 적극적인 광업 이외에도 약 1만 5,000명의 인력이 갈탄 정화부문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7.3 전력 공급 및 지역 난방 공급

동독의 총 전기 소비량은 1989년-1992년 기간중 약 60% 감소했는데, 이 중 산업체 부문의 전력 소비는 약 50% 줄어들었다. 동 기간중 전력 생산부문에 갈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서 92%로 늘어났다.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1990년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운영업체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 시설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원자력법상 필요한 허가들을 얻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독의 전력 산업은 향후 10년 내지 15년간 상당한 규모로 또 거대한 비용을 들여 가장 현대적인 전력생산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공급측면은 물론 수요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구동독 정부 및 신탁청이 서독의 에너지 공급업체들과 맺은 전력 협약(Stromverträgen)은 동독의 전력 부문 및 지역(地域) 난방(district heating: 遠距離 暖房) 부문을 민간경제의 기초 위에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대형 연소시설 규정과 관련한 해당 과도기 규정이 1996년 7월 1일자로 만료되므로 특히 콤비나트 차원에서 시설 보완 및 발전 능력의 확충을 위한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이 결정들은 각 주에 있어 가장 규모가 큰 투자계획들 중의 하나이며 갈탄 지역에 있어 일자리 보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1993년 7월 말 동독의 전력 공급과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을 둘러 싸고 연방 헌법재판소(독일 칼스루에 소재)에까지 올라간 분쟁에서 모든 분쟁 당

사자들이 연방 경제성의 타협안에 동의를 표명하고, 위헌 제소를 철회할 것을 밝혀 이 문제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미 1992년말 협상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동독의 전력 공급 및 지역 난방 공급 부문에 대한 수십억 마르크의 투자 장애요인은 제거되었다. 이와 동시에 “전력 협약”에 규정된 전력 콤비나트 기업 및 15개 지역 공급업체의 민영화 작업을 위한 장애 요인도 제거되었다.

동독 지역을 UCPTE (서유럽 통합기업 연합) 망에 연계하는 작업은 시급히 필요한 작업이지만 - 준비 작업 및 독일내 필요한 통합 연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늦어도 1994년중에는 이 작업도 실시될 것이다.

동독 전체주택 중 지역 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9%의 서독지역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독의 지역 난방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 시설의 높은 마모율, 낮은 전력-열-연계 비율, 높은 환경 부담, 불충분한 효율이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지역 난방이 에너지 정책 및 환경 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1992년-1995년 기간중 연방 정부는 지역 난방 공급의 재정비를 위한 투자 계획에 대해 매년 1억 5,000만 마르크를 지원하고 있다. 동독 주정부들도 연방 정부와 같은 비율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1992년에는 12억 마르크 상당의 투자가 실시되었다.

7.4 가스 공급

과거 동독 지역의 전체 가스 소비량(1989년: 1,730만톤 SKE)은 54%는 러시아 지하가스의 수입, 24%는 자체 가스 채굴 그리고 22%는 도시 가스에 의해 충당되었다. 도시가스는 주로 갈탄에 의해 생산되었다. 독자적인 저장소를 갖춘 지하 가스의 채굴은 1988년 이후 급격히 감소를 보이고 있다.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3가지 서로 분리된 가스관 시스템이 이용되었다. 각 가정들은 전지역에 걸쳐 있는 도시 가스의 공급을 받았다. 가정에서 난방 목적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겨우 8%에 지나지 않았다. 지하 가스는 거의 전적으로 산업체에서 사용했다. 동 베를린 지역은 유일한 예외로 이미 1989년 이전에 지하가스를 사용했다.

가스 부문의 구조 조정 작업은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범지역적인 차원(원거리 가스 단계)에서는 물론 지역적인 차원(지역 가스 공급)에서도 민영화 작업이 서독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의 참여하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지방자치체(도시공장의 설립)의 차원에서도 민영화 작업은 크게 진척되었다.

신연방주의 가스 경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가스망 및 소비자 시설의 지하가스로의 전환, 동독 지역 지하 가스망을 서독의 지하 가스망에 연결하고 나아가 서유럽의 가스 운송 체제에 편입, 지하 가스의 지하 저장소 확충 및 수입선의 다양화, 지하 가스 소비자를 위한 현대적인 기술 투입 등.

도시 가스를 지하 가스로 전환하는 작업은 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 가스를 공급받던 가구수는 약 300만호였는데, 1993년말 이중 80%에 대해 지하 가스로의 전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동 작업은 1995년/1996년중 완료될 예정이다. 가스 난방 가계는 1991년 9%에서 2000년에는 30%-32%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갈탄에 의한 난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91/1992년중 몇몇 소규모 지역적인 공급망 연결 작업 외에 2개의 대형 공급망을 서독의 가스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작업이 있었다. 대형 가스관 연결작업은 1993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지하 가스의 수입 의존성이 줄어들고, 안전한 가스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스 공급을 다양화하는 작업이 큰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제 전체 가스의 공급 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했다: 즉 러시아 지하 가스 수입이 53%, 서독으로부터의 공급이 16%, 동독 지역 지하 가스 채굴에 의한 공급이 16% 그리고 도시 가스에 의한 공급이 15%이다. 업체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지하 가스의 투입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때까지 가스 경제는 200억 마르크 상당의 투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7.5 석유 산업

통일전인 1989년 동독지역의 에너지 공급중 석유에 의한 공급은 13.9%를 차지했으며, 이는 서독의 42%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모든 석유 사업은 국가의 독점아래 병합되어 있었다.

통일후 시장경제적인 여건하에서 동독 지역의 석유 판매는 다른 1차 에너지들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과는 달리 매년 증가를 보여 왔다. 1차 에너지 전체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이미 29.2%로 늘어났다. 석유 소비의 증가는 무엇보다 개인적인 이동성의 증가, 도로 화물량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난방 시장의 급격한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난방 시장의 경우 경유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민간 또는 상업용 교통량 증가로 금세기 말엽에는 신연방주지역의 연료 소비는 약 50%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업체의 민영화 작업도 크게 진척되었다.

슈베트(Schwedt) 소재 동독 최대의 정유공장은 현재 5개의 독일 및 외국 업체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정유업체의 경영과 참여 회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 상당한 규모의 투자들은 입지의 안정과 일자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로이나/차이츠(Leuna/Zeitz) 정유회사들은 아직 신탁청 소유로 남아 있으나, 한 프랑스 기업과 민영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1996년까지

로이나 지역에 연간 1,000만톤 원유를 처리하는 새로운 정유공장이 설립된다. 이 정유공장의 신축으로 그 지역의 화학업체들에게 석유 화학 원료들을 공급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또 이 지역의 화학 산업의 보존에 중요한 여건이 마련된다.

석유의 분배 및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적인 구조의 확충 작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석유 판매 조직의 민영화가 실시되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공급업체들에 의한 효율적이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주유소의 설립 및 운영은 동독 석유 시장의 경쟁 도입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난방 시장에 경유 및 액체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급망 및 서비스망이 생겨났다. 동독 지역은 또한 석유 위기 비축에 편입되었다. 석유경제의 위기 비축을 실시하는 석유 비축 협회는 비축분을 동독 지역에도 저장하고 있다.

구동독의 정유회사들은 현재 거의 전적으로 구소련 지역으로부터 가스라인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 운영자들은 이같은 공급 방식에 대해 물류(物流) 논리적인 대안을 계획하고 있다. 공급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연방 정부도 이같은 계획을 과단성 있게 실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8. 구동독지역 주택 부문 및 건설 부문의 시장경제적 혁신

8.1 1989/90년 당시의 상황

8.1.1 주택 현황

동독에서는 통일 이전 1971년 1월 1일과 1981년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 현황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현재 끌어낼 수 있는 주택 현황 및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한 수치들은 가장 최근의 조사 수치인 1981년의 조

사 결과를 재인용한 것이다.

주택 완성의 수치는 주택 현황에 관한 동독 통계의 재인용이든 모두 혼선의 여지가 있다:

- “완성 수치”에는 추가적인 신축 주택만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현대화 작업을 통해 “완성된”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주택들은 비록 주택 보유고에 증가분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완성 수치 개념은 연간 주택 생산의 결과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1971년-1989년 기간 중 완성 수치는 약 120만호 정도가 터무니없이 더 높게 계산된 것으로 입증된다.
- 현 보유고의 재인용은 주택 퇴거(退去)가 “허가의 의무를 득해야 하는 것” 이외에도 - 부족한 주택 상황과 관련 -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게 책정된 것이다. 따라서 퇴거 및 용도변경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신고가 이루어져 통계에 파악되었다. 1989년 12월 31일 드러난 주택보유고는 700만호였다. 따라서 이 주택 보유수치는 아마도 실제로 사용가능한 주택보유고보다 10%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동독 지역의 주택 공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은 1993년과 1995년으로 계획된 통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8.2.8 부분 참조).

동독지역의 주택 현황 구조를 서독의 주택 보유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동독지역의 주택 재고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것이다. 1948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독지역에서는 약 70%에 이르는 데 비해, 동독 지역에서는 45%에 불과하다.
- 다세대 주택들이 우세하다. 전체 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독의 경우 50%이나, 동독의 경우는 70%에 이른다.

- 주택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서독 지역에 있어 주택의 크기는 4.4개방 평균 86 평방미터인데 비해, 동독 지역의 주택의 크기는 평균 2.9개방 65 평방미터이다.

구동독 시절에는 가능한 한 완성주택수를 높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절약이 있어야 했다. 건축 시행의 질적인 면은 종종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주택 건설을 신고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에 희생되어야 했다. 따라서 최소한 자원을 징발 사용할 경우 단기적인 생산 성과는 거둘 수 있으나 종종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이라는 희생을 수반해야 하듯이, 특히 조립식 주택들에서 발견되는 바 질적인 면에서의 결함들과 보유 주택에 대한 보존조치의 소홀로 인해 막대한 주택 재정비 수요가 생겨났다.

주택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공식 주택 보유 수치중 22만 5,000호는 거주가 불가능해 토목 관청에 의해 폐쇄되었다(건축상태 IV 단계). 건축상태 III 단계에 속하는 80만 900호(심각한 손상, 완전 수리를 요하는 주택) 중 34만호는 단기간내에 IV 단계에 편입될 위험에 있다. 독일 주택건설협회(GdW)는 건축상의 손상으로 인해 30만호 내지 50만호의 주택이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1989년 12월 31일 동독 지역 보유 주택의 질적인 구조에 관한 또 다른 몇가지 중요한 수치들이다:

- 욕실/샤워실 미비 주택 : 약 18% (130만호)
- 실내 화장실 미비 주택 : 약 24% (170만호)
- 현대적인 난방 장치 미비 주택 : 약 53% (370만호)
- 전화 설비 미비 주택 : 약 84% (590만호)

이같이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주택 중 일부는 주택의 질적인 면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전체경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부담으

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고(高) 에너지 소비 및 물소비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전화 접속이 미비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신망이 미발달했음을 표현해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전체 경제의 생산성에 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8.1.2 소유권 관계 및 자원 조달

동독 주택부문의 소유권 관계는 그 체제상 서독 지역과는 전혀 상이한 방향의 발전을 보였다. 사회주의적인 주택 소유를 지배적인 소유 형태로 한다는 목적을 설정함에 따라 국영 주택 및 조합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늘어났다. 민간의 자기 주택 건축은 크게 제한을 받았으며, 주택 저축은 1971년 폐지되었고, 민간 임대주택의 건축은 억제되었고, 자원은 국가소유의 주택 건축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국가 또는 조합 소유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1년 38%에서 1989년에는 59%로 늘어났다. 민간 가계가 소유하는 주택의 비율은 이에 따라 62%에서 41%로 낮아졌다.

서독 지역의 경우를 보면 1987년 모든 주택의 80% 이상이 민간 소유에 속했으며, 약 20% 만이 공익 주택 또는 공공 소유에 속했다.

동독에서는 1936년부터 최고 임대료를 동결시킨 결과 국영 주택 또는 조합 주택의 임대료 수입은 매년 반드시 필요한 주택 보수 조치와 주택 운영 비용의 25%만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였다.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은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이거나 은행 차입을 통해 충당되었다.

민간 주택 소유자들은 다음 두가지 경우로 대별된다:

- 그 한 가지는 자기 주택의 건설이 미리 입안된 대규모 계획에 의한 것으로 - 건축재료 구매 권리와 연계된 - 유리한 이자 조건의 융자에 의한 지원을 받아 주로 시골 지역에 세워지는 경우이다. 이같은 지원은 또한 시골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막고 농업 기업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다. 자기 소유 주택의 보존과

확충에 필요한 건축 재료도 구매 증서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지속적인 건축 재료의 부족으로 실제로 건축 재료를 종종 암시장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임대 주택의 개인 소유주는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임대료로서는 부족한 재원을 자기 자본이나 기타 재원에서 충당해야 했다.

8.1.3 건설업의 구조

과거 동독에서는 80년대말 매년 약 480억 동독마르크(Ost-Mark) 규모의 건축 활동이 있었다. 1990년 하반기중 동독의 건축 생산은 120억 마르크(DM)에 이르렀다.

1990년 보유 건물의 규모와 시설을 보면 이 정도의 건축 활동은 국민 경제 각 부문에 걸쳐 제기능을 갖춘 건축물을 마련하고 확보하는데 결코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건축 경제 자체가 하나의 병목 상태에 놓여 있는 경제부문이었으므로 건축 활동의 20%는 다른 경제 부문의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건설부의 감독하에 있는 건축 관련 수공업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동 부문의 생산은 건설업 생산의 12%를 차지하는데 불과했으나, 80년대 말 업체수 (약 15,000개)는 건축업 기업수의 500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였다. 당시 건축 관련 수공업 부문의 종사자 수는 10만명이었고, 건축업 종사자는 43만명이었다. 건축 관련 수공업 부문의 생산 중 절반은 민간 수공업 업체들 및 생산 조합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민간업체의 수는 수공업 생산 조합(PGH)의 수보다 몇배나 더 많았다.

1972년에는 마지막으로 동독 건축 부문 소유권 관계가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는 민간에 속했던 수많은 업체들이 그 당시 국가 자본참여의 업체들로 전환된 후 콤비나트에 병합되었다. 이를 통해 국영업체들의 비율은 1950년 36%에서 1972년에는 73%로 늘어났다.

8.1.4. 결정적인 오류들

동독 초창기에는 주택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에리히 호네커가 사회주의 통일당(SED)을 떠맡은 1971년 이후부터 주택 건축은 사회주의 통일당의 최우선적인 사회 정책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로서의 주택 문제”는 20년내에 해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집권식 계획 경제 체제가 지닌 불리한 여건은 이같은 목표와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 시장경제적인 가격 형성의 미비로 실질적인 주택 수요와는 무관하게 자원이 사용되는 등 자원 분배가 오류를 면할 수 없었다.
- 건축 경제의 국유화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사라지고 혁신 가능성이 거의 생겨나지 않았다.
- 명백한 체제상의 오류들은 언제나 거대한 노력을 기울여 일반 대중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만들었다. 주택 “완성” 수에 나타난 순수 주택 현대화 비율은 1971년 12%에서 1989년에는 53%로 늘어났다.

8.2 사회적 주택 경제의 발전

8.2.1 주택 부문의 소유권 관계 확인

동독 지역 구 인민소유 주택 중 30%는 현재 소유권 관계가 완전히 해명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재산 귀속(歸屬)의 문제는 기존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기 계획된 보존 및 현대화 조치의 실시 그리고 민영화 계획의 실시 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1990년 10월 3일의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이 구 인민 소유 (VEB)-주택기업들이 보유한 240만호의 주택에 대한 소유주가 되었다. 주택조합들은 조합 산하 약 110만호의 주택 소유주로 계속 남아 있다. 구 동독법에 따르면 주택 조합들은 토지의 이용에 있어 단지 물권적인

이용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와 건물 소유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주택 조합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들을 주택 조합에 이전시키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같은 이전 작업에는 실제로 법적·행정적 장애 요인들이 있었으므로, 주택 조합들은 1993년 6월 27일 연방 재정건설화방안의 일환으로 발효된 주택조합 재산법(Wohnungsgenossenschafts- Vermögensgesetz)에 의해 법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될 수 있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크기에 따라 토지 이전에 대해 평방미터당 1 마르크 내지 3 마르크를 지방 자치 단체에 지불했다. 주택 조합들은 보유 주택에 대한 보수는 물론 신축을 위해 기업적인 행동 영역을 시급히 필요로 했는데, 이 규정을 통해 이같은 행동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방 자치 단체들은 재산 귀속이라는 범주에서 상급 세무 담당 기관과 더불어 자신이 관장할 수 있는 토지가 어떤 것들이며 어떤 토지 자산을 이전시키는지를 명확히 해야 했다. 토지 관계는 새로 정립되어야 하며 토지 대장 등재를 통해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제 2차 재산법 개정 법률(Das Zweite Vermögensrechtsänderungsrecht)의 제정으로 이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촉진하는 중요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 1992년 12월 31일자로 20만호 주택에 대한 국가 관리는 물론 재반환 혹은 보상청구권 신청 가능성이 종료되었음. 접수된 신청건들은 이제부터 지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
- 공청회를 도입함으로써 주거 목적 토지의 신속한 반환 및 재평가가 가능해짐.
- 법적 귀속 계획이 구비됨에 따라 대규모의 신축 지역들이 신속하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새롭게 정비될 수 있음.
- 투자우선법(Investitionsvorranggesetz)에 의해 부동산의 신속한 반

환 내지는 매각이 가능해짐. 그 전제 조건은 구 소유주 또는 투자가가 주택의 신축 또는 전반적인 보수를 계획한다는 것임. 구 소유주가 투자가가 제시한 계획에 비견할만한 투자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가는 구 소유주보다 우선권을 가짐.

현재 동독의 각 주에는 재산권 귀속의 시범 계획들이 실시되고 있다.

8.2.2 임대료 개혁

1991년 10월 1일 제 1차 기본 임대료 인상 규정(Erste Grundmietenverordnung)이 발효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1단계 조치로 합법적인 주택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소득 추세를 고려하여 기본 임대료가 0.8 마르크에서 2 마르크로 인상되었다. 평방 미터당 최고 3 마르크의 난방비, 온수비를 규정한 관리비 부과 규정을 근거로 관리비를 추가할 경우 총 임대료(기본임대료에 난방비등 관리비를 추가)는 평방미터당 월 평균 1.30 마르크에서 5.50 마르크로 올랐다. 기본 임대료 인상 및 관리비 추가 가능성을 통해 국가 보조금의 폐지 작업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 규정은 동시에 안정된 주택 관리를 위한 경제적 전제 조건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이익에 기여했다.

1993년 1월 1일자로 제 2차 기본 임대료 인상 규정(Zweite Grundmietenverordnung)이 발효되자 기본 임대료는 또 한차례 인상되었다. 기본 임대료는 주택의 설비 상태를 고려한 기본 금액과 건물의 보존 상태와 관련한 3가지 건물 상태 추가금으로 구성된다. 제 2차 임대료 인상 조치의 결과, 기본 임대료는 1993년 1월 1일자로 거의 2 마르크 인상되었다.

1994년 1월 1일부터는 건물 상태와 관련 평방미터당 월 각각 0.30 마르크에 해당하는 두가지 추가 금액이 더해질 수 있다. 그러나 평방미터당 3 마르크였던 난방비용 및 온수비용의 최고 한계는 2.50 마르크로 줄어든다.

이같은 일련의 임대료 개혁을 통해 동독 지역 주택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전제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8.2.3 주택보조금의 도입 및 조정

구서독 지역에서 1965년부터 실시해 온 주택보조금(Wohngeld) 제도가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이 제도는 우선은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 소폭 변경되어 적용되었다. 1991년 10월 1일의 제 1차 임대료 인상조치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조치와 함께 주택보조금 특별법(Wohngeld-sondergesetz)이 도입되었다. 199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이 법은 특히 서독의 주택보조금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개선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 가족 관련 특수 공제액을 통한 주택보조금의 보다 과단성있는 책정
- 고려 가능한 주택 비용의 상향 조정
- 전체 추가금의 형태로 나타나는 난방비 및 온수 비용의 고려(이 추가금액은 점차적으로 폐지됨)
- 주택보조금법상 중요한 소득 조사에 관한 광범위한 규정들을 포기함으로써 절차의 단순화

993년 1월 1일 제 2차 임대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 대부분 1992년 9월말로 만료되는 주택보조금 승인 유효 기간을 법률을 통해 자동적으로 1992년 12월 31까지로 연장
- 주택보조금 목록의 확대
- 주택보조금 특별법을 1994년 말까지로 연장
- 특정 장애자에 대한 공제액과 6.5% 상당의 추가적이고 일반적인 전체 공제의 도입

- 주택보조금법상 중요한 연간 소득 조사에 기타 수입을 포함

1992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보면 동독 지역에 있어 주택 보조금이 원하던 수준의 사회 보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중 약 240만건의 주택보조금 승인이 있었다. 1992년 6월 30일 임대가계의 31%가 임대료 보조금의 형태로, 그리고 자기 주택 소유 가계의 20%가 부담 보조금의 형태로 주택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주택보조금은 123 마르크였다. 이 주택보조금은 추가비용을 제외한 순임대료(Kaltmiete)가 수혜자의 가용 소득에 미치는 부담이 평균 11% 정도로 낮아지게 했으며, 난방·온수 비용을 포함한 총임대료(Warmmiete)에 의한 부담은 약 16% 정도가 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서독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다소 고소득층에 속하는 주택보조금 수혜자들의 경우 순임대료가 가용 소득에 미치는 부담은 24%, 총임대료가 가용 소득에서 미치는 부담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동독 지역 거주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는 면에서 이같은 조치가 호응이 크다는 점은 주택보조금 청구 권리가 있는 주민들중 10%만이 주택보조금 신청을 포기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8.2.4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주택 건설 장려

동독 지역의 주택 건설 투자에는 특히 세제상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투자촉진법(Fördergebietgesetz)은 동독 지역의 임대 주택 건설에 대해 처음 5년간 50%의 특별 감가상각(Sonderabschreibung)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 주택 건설에 있어 특정한 주택 현대화 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제상의 특별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도록 되어있는 이 규정들은 연대 협약의 결과에 따라 1996년말까지 연장되었다.

임대주택이 아닌 자기 주택 소유자들은 1994년말까지 4만 마르크의 주택

현대화 비용에 대해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세제상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 형태로는 1991년과 1992년중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주택 확충, 개조, 보수등에 의한 새로운 임대 주택 설립 재원이 제공되었다. 연방 정부에 의한 부흥은행(KfW) - 주택 현대화 프로그램도 저리(低利)의 융자를 통해 이같은 조치들을 지원했다. 이 양대 프로그램을 통해 1991년, 1992년중 동독에는 약 4만 5,000호의 임대 주택이 생겨났다.

1991년부터 사회복지 주택 건설(Sozialer Wohnungsbau)에 대해서도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이 있었다(표 6 참조). 기존 주택이 상당한 보수를 요하는 경우 이 재원은 주택 현대화 및 보수 조치를 위한 지원으로 투입될 수 있다.

표 6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주택 건설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

(백만 마르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서독 지역	2,000	1,760	2,700	2,700
동독 지역 (현대화/보수 포함)	-	1,000	1,000	1,250

이외에도 1991년에는 동독 지역에 대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건설이 시작된 임대 주택의 완성과 1990년 6월 30일까지 건설이 마무리되지 않은 개인주택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회적(一回的)인 지원 조치가 있었다.

주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들도 상당한 재원을 지원했다. 연방 재정 지원 및 주 자체의 재원의 투입에 관한 결정은 연방 헌법상 주택 건설 지원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정부에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 주택 신축, 소유권의 형성, 현 보유 주택의 재정비와 관련 지역간 상이한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었다.

동독 지역에 있어 수십년간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주택들의 수리·현대화 작업은 분명 주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동독 부흥”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대화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정부는 1991년, 1992년 중 16억 마르크의 연방 재원을 제공했다.

이와 아울러 연방 정부는 1990년 10월 3일부터 부흥은행(KfW)-주택 현대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저리(低利)의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1993년 4월말까지 약 170억 마르크에 이르는 투자 촉진 승인이 있었고, 이를 통해 100만호 이상 주택의 현대화 작업 및 보수 작업이 지원을 받았다. 청구자가 많아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여러 차례 증액(增額)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연대 협약이 체결되면서 600억 마르크로 늘어났다. 이 중 특히 유리한 조건의 100억 마르크는 조립식 주택들의 정비를 위한 것이다.

동독 주택에 대한 현대화 조치 및 보수 조치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 결과 1992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구동독 주택의 25%에 대해 현대화 조치 또는 보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8.2.5 구채무 문제의 해결 및 주택 기업의 투자력 강화

과거 동독의 주택 신축을 위한 재원 조달은 주로 저축 은행들에 있는 주민들의 저축액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 동독 국가은행(Staatsbank)⁹⁾에 들어 있는 동독 주민들의 저축액 중 약 70%가 인민 소유 또는 조합 소유의 주택 건설을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주택 자산은 부채와 함께 지방 자치 단체에 이관되었다.

9) 역주: 구동독 국립은행이었던 이 은행은 현재는 독일 크레딧뱅크(Deutsche Kreditbank)라는 이름하에 신탁청의 자회사로 되어 있음.

주택조합들의 주택 건축 채무들은 주택 조합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90년 7월 1일 화폐 통합시 지방 자치 단체와 주택 조합의 채무액은 약 360억 마르크에 달했다. 연방 정부의 주도로 은행들은 채무가들에게 1993년 12월 31일까지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허용해 주었다. 1994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동독 주택 부문의 총부채 - 즉 이른바 “전환 주택(Wendewohnung)”의 부채와 민간 임차인의 구채무까지 포함한 - 는 약 590억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해결된 구채무 문제로 인해 동독의 주택 부문이 새로운 부채를 차입하는 작업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임대료로 인한 수입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 차입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은 포기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연방 정부는 연대 협약의 범주에서 동독 주택 부문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조치를 강구했다. 구체적으로 연방 재정건실화방안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구채무지원법(Altschuldenhilfegesetz)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 주택 기업에 대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신청에 의거 임대 가격과 관련된 주택 면적 1 평방 미터당 150 마르크까지 부분 탕감. 이를 위해 “구채무 변제기금(Erblastentilgungsfonds)”은 구채무 310억 마르크를 떠맡게 되며, 연방은 이로 인해 1995년 7월 1일부터 연간 28억 마르크의 부담을 지게 됨.
-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 기간중 부채로 인한 이자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이는 동독 주택 부문에 대해 70억 마르크 이상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임.

이 대규모의 부분적인 부채 탕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특히 포괄적인 기업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기업 구상은 현 주택의 정비 작업 및 현대화 작업을 위한 투자 정보는 물론 민영화 구상도 포함해야 한다.

한 기업이 부분적인 부채 탕감을 신청하면, 그 기업은 10년 내에 기업 소유 주택의 적어도 15% 이상을 매각해야하는 의무를 진다. 취득자로서는 이제까지의 세입자가 우선적이지만, 투자가도 취득자로 고려 된다. 수혜 기업이 자체적인 이유에서 이같이 주어진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기업은 부분 탕감액을 일부 또는 전부 재상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주택 기업들은 매각 대금의 일정한 비율을 “구채무 변제 기금”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이 지불액은 한 기업이 민영화 의무에 충실하면 할수록 줄어든다. 시간적인 등급에 의해 과감한 민영화 작업이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투자 실시에 필요한 추가 유동 재원이 제공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의 민영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의 주택 정책도 고려한 것이다.

구채무 문제의 해결은 이제까지 주택 부문 투자에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물중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구채무문제의 해결로 기업의 신용 차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신중한 예측에 따르면 하더라도 동독 주택 부문에 대한 연간 투자는 현재 130억 마르크에서 약 300억 마르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 부문은 경제의 핵심 부문의 하나이므로 동 부문에 대한 투자는 소득과 고용이라는 승수(乘數) 효과 외에도 동독 지역 전체 경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8.2.6 주택 민영화

동독 지역에 있어 개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지원은 연방 정부의 중요한 주택정책적 현안이다. 주택 소유는 사회적, 재정적 안전을 창출하며, 재산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동독의 자가(自家) 주택 소유가 20%-25%로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문의 보충 수요는 매우 큰 편이다.

이와 관련 통일조약에는 이미 구 인민 소유의 주택들을 사회적 주택 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하나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또한 통일조약에는 주

택 민영화의 가능한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것과 투자가들에게 임대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명확하지 못한 토지 소유 문제 외에도 특히 임대료 인상 재량권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비수익성, 투자가에게 매각시 “사회적 계약”과 관련한 불안 요인들이 민영화의 장애 요인들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현재 주택 민영화는 세입자에게 매각하는 작업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민영화 노력들을 지원하고 있다. 31개의 시범 계획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민영화 가능성이 실험되고 있다. 세입자에게 주택을 매각할 시 실제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해결책들이 모색되고 있다. 시범 계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민영화 주체(지방 자치 단체, 주택 회사, 외부 계약수행자), 건물 또는 주택의 형태(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 조립식 건물, 공장부속 사원 주택)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와 주의 크기에 따라 평가치를 달리 적용했다. 1991년, 1992년 기간중 6,500호의 주택 매각을 위해 매년 2,000만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민영화를 위해 지정된 주택이 완전하게 또는 거의 완전하게 매각되었다는 기준에서 보면 1993년 3월말 현재 시범 계획은 약 1/3 정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매각 작업은 너무 복잡해 민영화 작업이 아직은 기대했던 만큼의 역동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구채무 문제 해결이라는 범주의 민영화 조건은 주택이 신속하게 매각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현재까지 동독지역에서는 약 2만호의 주택이 이전 세입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방 건설성은 전체 민영화 대상 주택수를 100만호로 추산하고 있다. 광범위한 민영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방의 주택 기업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 관할하에는 충분히 많은 수의 주택이 남아 있게 된다.

8.2.7 주택난의 해소

사회복지 주택의 건설(Sozialer Wohnungsbau)은 소득과 관련한 특별한 입주(入住) 의무에 종속된다. 전체적으로 임대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 및 주택 조합의 주택 제도에 있어 입주권 보장에 관한 법(입주권법)은 동독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 소속 주택 기업, 주택 조합, 공장 부속 사원 주택(Werkswohnung)에 대한 추가적인 입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법에 따른 입주 의무 및 임대 가격 의무의 전권 위임은 통일조약에 의하면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그러나 연방 재정건설화방안 시행을 위한 법률은 구채무지원법(Altschuldenhilfegesetz)내에 권한 위임 규정을 두어, 주정부가 이 시점 이후부터 10년 내지 20년 기간 동안 구채무지원이 보장되는 주택들에 대해 특정한 입주 의무를 확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8.2.8 주택 정책을 위한 통계적 기초

주택 통계법은 1995년 9월 30일을 최종일로 하여 동베를린을 포함한 구 동독 지역의 건물과 주택수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독일적으로는 1993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의 건물 및 주택에 관한 무작위 검사가 실시된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전독일적인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현재의 주택 정책과 주택 경제의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이고 단일한 기초 자료를 얻게 된다.

8.3 중간 결산 및 중기적 전망

동독의 주택 상황을 서독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목표는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수명이 길고 자본의 집중도가 크다는 점은 현재의 구조를 단기간내에 변혁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또한 주택 경제의 수준 향상은 경제부문의 생산성, 소득 수준의 향상, 수요의

발전, 건축 부문의 포괄적인 구조 조정등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

주택 공급은 (다른 물품의 공급에 비해) 수년간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 건축 활동을 일방적으로 복잡한 신축물의 건축에 집중시키고, 임대 주택을 장려함으로써 개인 소유 주택을 대폭 축소시킨 결과, 구동독 지역에는 전쟁의 영향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주택들의 붕괴가 가속화되었고, 이 중 대부분은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주택 요건들에 대폭 미달한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동독 주들과 합의하에 실시된 사회적 주택 시장 경제(Soziale Wohnungsmarktwirtschaft)의 도입은 당초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임대법과 소유권법을 통해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고 연방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개혁 과정의 사회적 파장을 줄임으로써 연방 정부는 전체 보유하고 면에서는 물론, 신축 부문에서의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구채무 문제의 해결은 주택 부문의 신용 차입 능력, 투자 능력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이를 통해 주택 부문의 자력 성장이 시작되었고, 이는 다른 경제 부문에도 그 여파를 미칠 것이다. 동독 주택 시장의 발전과 주택 이용의 개선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8.4 건설 부문의 구조 조정

8.4.1 시장경제적 하청 제도의 도입

1990년에는 건설 수주 할당 규정(VOB)이 새로 마련되었는데, 동 규정은 동독 지역에도 공공 건설 수주의 시장 경제적 분배를 위한 결정적인 법안으로 도입되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공 건설수주 부문에 있어 EU 법을 독일 국내 법으로 전환하는 법안의 성격도 띠고 있는 동 규정은 동시에 공공 건설부문에 있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자유화와 조정화라는 EU 규정을 동

독 지역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동독 지역이 독일 연방에 편입되면서 우선은 동독의 전체 건설경제가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고, 하청업체를 비롯한 건설 부문을 장려하며, 공공 부문 건설 투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관료주의의 폐단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1991년 연방 건설수주 담당 부서들과 이에 뒤이어 동독 주정부내 건설 담당 행정기관들은 우선적으로 1992년말까지 그 효력을 제한시킨 수주할당 특별 규정을 도입했다.

그 사이 이 특별 규정의 핵심 사항들은 1993년말까지로 연장되었다. 무엇보다 공공 입찰 후 제한 수주(Beschränkte Ausschreibung)를 10만 마르크까지의 수주가에, 비경매 수주할당을 2만 5,000마르크의 수주가에 확대 적용시킨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특히 공공 입찰 후 제한 수주는 종종 신연방주 기업들에게 의도적으로 수주를 할당해 주는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치는 건설부문의 수공업과 중소기업들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의 건설 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건축 부문의 발전이 진행되었다.

1991/92년 동 특별 규정이 적용되면서 연방, 주정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의 수주배분을 보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수주의 90% 내지 97%가 동독 기업들에게 할당되었으며, 이중 지방 자치 단체의 수주배분을 보면 70% 이상이 중소기업들에게 할당되었다.

‘연방 지역 개발, 건축, 도시 건설성’이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구동독 건설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2,000명이 참가하여 이 특별 규정의 내용과 실질적인 적용 문제등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

8.4.2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및 유해 물질 방출 감소

특히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방출을 포함, 동독지역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방출은 이미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 작업은

또한 계속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지역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₂-방출은 1987년 3억 4,400만톤에서 1992년에는 1억 8,10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통독 출발연도에는 동독 지역의 주민 1인당 CO₂-방출은 22톤이었다(서독 지역은 주민 1인당 약 11톤).

효과적인 기후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독의 경제 부흥을 CO₂-감소조치, 특히 에너지 효율의 대폭 개선 작업과 연계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몇년간 환경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건물 부문에 대한 조치들이다. 동독 지역에서는 1차 에너지로 갈탄 사용율이 높고 나쁜 건축 재질로 인해 건물 난방이 특히 커다란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다. 많은 난방 시설들이 기술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은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이용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난방 시설의 현대화 작업 외에도 건물의 단열 기술의 수준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열 규정, 난방 시설 규정, 난방비 정산 규정, 소형 난방 시설 규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유해물질 방출에 관한 법규들이 물론 어느 정도 과도기간을 두기는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고 있다. 난방비 정산규정에 들어 있는 법령들을 제외하고는 동 법규들의 수정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목표는 노후한 난방 시설들을 가능한 한 단시간내에 현대화하고 새로 설립되는 건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 수준을 저에너지 사용 건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해당 개정 법안의 공청회에서 동독 주정부들은 법규에 규정된 요구 수준을 동독 지역에도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고 발효시킨다는데 찬성했다.

건축 재질의 이질성과 이로 인한 부담들로 인해 건축 재질 부문에서는 포괄적인 추가 조치들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동독에서는 이 조치들은 주로 통합적으로, 즉 건물 재정부 또는 현대화 작업과 연관해서 실행해야 할 것

이다. 개정된 단열 규정(Wärmeschutzordnung)은 물론 앞으로 그 수준이 높아진 단열 요구 조건들이 특별 조치의 형태로 기존의 건물들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난방 부문에서 갈탄 에너지원의 대체 작업도 특히 중요한 역점 사항의 하나이다.

신연방주의 건물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는 이미 일련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주택 현대화 및 보수 작업, 그리고 이를 통한 대폭의 CO₂-방출 감소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이에 대해서는 본 장 VIII. 2.5 부분 참조). 에너지 절약과 CO₂-방출 감소를 위한 조치들이 지원가능한 구성 요건으로 특히 부각되었다. 현재 이 조치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재원들이 주로 이같은 목적들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료 제공, 상담 지원의 강화, 건축물 보존 및 현대화 연구 기관의 창립 등으로 CO₂-방출 감소 구상을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개선되었다.

9. 구동독 지역 농업의 구조 조정

9.1 1989/90년 당시의 상황

9.1.1 농업 제도, 구조 및 종사자

“공업적인 생산 방식”을 갖춘 국유화된 대형업체라는 농업 정책적 모델과 구동독 농업 부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회적 변혁은 상당한 오류를 초래했다. 그 결과 농민의 소유는 배제되고, 조합 운영·국가 운영의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89년 농업 부지(NL)와 동물 사육의 90%가 4,530개의 농업 생산 협동조합(LPG), 580개의 인민 소유 농장들, 그리고 국영업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 나머지는 조합원의 사적인 이용, 소규모 개인 생산업자, 교회 소유의 농장, 그리고 약 3,500개의 자영업자들에게 속했다(부록 Nr. 156 표 참

조).

양 독일 지역은 통일 당시 농업 부문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차이를 갖고 있었다:

- 구서독의 농업이 주로 토지 중심으로 생산 활동을 한 반면, 구동독의 경우는 식물 생산과 동물 생산이 분리되었음.
- 서독 중농(中農)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약 30 헥타였는데, 농업생산 조합은 평균 265명의 종사원이 4,500헥타의 토지를 갖추고 있었음. 가축 사육은 전문화된 업체들이 담당했는데 평균적으로 124명 종사원에 소 1,700마리, 돼지 3,400마리, 양 600 마리, 가금(家禽) 9,600마리를 사육했음.
- 생산조합 또는 국영의 생산외에 사적인 생산 부문도 대규모의 국가 지원을 받았음. 150만명의 생산자들이 도살 가축의 15%, 계란의 34%, 과일 22%, 야채의 14%를 생산했음.
- 전체적으로 식품 산업은 570개 업체 및 콤비나트, 27만 5,000명의 종사원을 갖추고 있었고 840억 마르크의 매출액을 기록했음. 원료의 질, 대부분 노후화된 생산 시설, 보조 재료 및 운영 재료, 포장 재료의 부족 등이 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구동독의 농업은 주민들의 공급 문제를 가능한 한 자급 방식으로 해결하고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데 주력했다. 동독 총생산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였다. 종사 인원, 생산 자본, 투자, 충분한 경지의 확보에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농업 부문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부족했다. 능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식료품 및 농기구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과, 업체의 구조를 자연적인 입지 여건에 조정하는 것을 종종 불가능하게 만든 상명하달식의 생산 목표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비경제적이며 환경적인 면에서도 유해한 동물 사육과 식물 생산의 분리는 높은 수준의 수송과 관리 비용을 요구했으며 환경 오염을 야기시켰다. 농업 업체들간에는 경쟁이 생겨나지 않았다.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매 보장, 가격 보장은 창의성과 모험심을 앓아 갔다.

특히 효과적인 인센티브(동기 유발) 시스템의 부재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농업 부문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소유 박탈, 소득의 규제는 성취욕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 협동 조합(LPG)의 노동제도는 상공업 부문의 노동 제도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개별 업체들을 재설립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토지나 농가에 대한 농민들의 구속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대체로 포괄적인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동독의 농업 부문은 비효율적인 조직과 부족한 기술을 인력의 투입을 통해 보완하려고 시도했는데, 동독 농업 부문의 인력 투입은 서독 지역에 비해 두배나 높았다. 1989년 동독 농업 부문에는 85만명이 종사했는데, 이중 50만명은 주생산, 18만명은 보조 생산, 그리고 10만명은 행정, 4만 3,000명은 문화·사회 활동에 종사했다. 농업 종사 인구중 76%는 생산조합에 속했고, 여성종사자의 비율은 38.5%였다.

9.1.2 농산물, 시장 상황 및 경제성

명백히 높은 생산자 가격, 수출 지원의 특징을 지닌 동독의 농산물 가격 체제는 가능한 한 고수준의 자급도를 이룩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기본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 물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는데, 이는 국가 보조금을 통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가게의 식품 지출비는 가게 전체지출의 22%를 차지, 구서독보다 높았다. 아울러 판매 식료품의 다양성과 질이라는 면에서도 동독은 서독 수준에 훨씬 못미쳤다.

동독은 중요한 동물 생산의 경우 100% 자급도를 이루었으며, 많은 식물 생산물의 경우에도 여러해 평균을 내면 100% 자급도를 달성했다. 또한 육류, 유제품, 버터, 설탕, 동물, 감자들의 1인당 소비는 구서독을 능가했다. 무엇보다 곡물, 버터, 식물성 기름, 유지 등은 수입을 필요로 했다.

동독은 620만 헥타의 농경지(LF)를 확보하고 있어, 농지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자연적인 입지 여건(토지, 기후)은 서독보다 불리하다. 그러나 주민 1인당 농지 면적은 거의 2배에 이른다. 주민 1인당 동물수에 있어서도 동독은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독보다 40% 더 높았다.

수익면, 능률면에서는 주어진 가능성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서독에 비해 아주 뒤떨어졌다. 식물 생산의 경우 동독의 수익은 서독에 비해 16% 낮은 수준에 있었다. 젖소당 우유 생산도 약 4,000 킬로그램으로 서독의 84% 수준이었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자 단계에서는 대폭적인 가격 인하가 발생했고, 중요한 기본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은 현저하게 상승했다. 즉 생산자 가격은 약 65% 내려갔는데, 이중 식물 생산은 50%, 동물 생산은 70% 내렸으며, 농기구 가격도 30% 정도 내렸다. 국가 지원의 철폐로 소비자 단계에서 식료품의 가격은 약 20% 정도 올랐으며, 공급품들은 아주 다양해졌다.

동독 농업 기업들의 수익성은 1986년 이후 여건이 점점 불리해짐에 따라 불안정하고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부록 Nr.157 표 참조). 업체의 비용이 수익보다 더 높은 상승율을 보였는데, 가장 주요한 비용 요인은 재료비와 임금이였다. 수익성과 비용의 추세가 불균형을 보임에 따라 업체들의 이익은 연간 약 2.2%씩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결과 생산 협동 조합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1984년-1989년 기간중 20%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동 기간중 업체들의 예비 자금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들의 수가 늘어났다. 투

자의 감소와 더불어 시설 자산도 점점 노후화 현상을 보였다. 기술과 건물들은 마모 정도가 심했으며, 상당히 많은 수리 비용을 야기시켰다. 1990년 하반기에 동독의 농업 기업들은 결국 심각한 해체 문제와 재정 문제에 봉착했다.

9.1.3 환경 오염

완전 집단화와 결합된 대규모 경작 방식, 식물 생산과 동물 생산의 분리는 자연적인 재료의 순환과정과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지역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도의 환경 손상을 가져왔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 즉

- 정리되지 않은 경작지에 무기 비료 저장 확대
- 액체 비료, 사일로, 무기 비료 저장소의 열악한 건축 상태
- 부분적으로 편류(偏流)현상이 심한 비행기에 의한 대량의 공중 비료 살포
- 종종 처리가 불확실한 액체 비료
- 사후 처리가 힘든 식물 보호제의 대폭 투여
- 침전물 살포, 퇴비 투입, 오염된 지표수에 의한 농경지 관개, 폐수 방출과 배설물 살포 등의 결과

토지와 물은 과도한 재료 손상으로 부분적으로는 심한 정도의 오염을 보였다.

아울러 토양의 중금속 오염은 농경지의 2%에 해당하는 15만 헥타가 잠재적으로 심한 정도의 중금속 오염을 보여 한계치에 도달했다(부록 Nr. 158 표 참조). 같은 품종의 농작물 재배 단위를 크게 함으로써 경작 단일화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생산 목표를 할당한 결과 토양 부식 과정은 더욱 강화되었다(부록 Nr.159 표 참조). 총 50만 헥타의 소택지(沼澤地)중 1/4이 집중적이고 일방적인 경작으로 파손되었다.

환경 문제의 차원은 특히 구서독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생산 수준은 낮으

면서도 헥타 당 훨씬 더 많은 무기 비료를 투입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화학적인 식물 보호제의 평균 사용량도 훨씬 많았다. 그 원인은 노후하고 마모 정도가 심한 생산 수단의 투입 때문이다. 전체 토지중 경토지(輕土地)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자양물 세척과 이로 인한 폐수 오염을 가중시켰고, 이는 부식 작용을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더욱 심한 악순환을 가져왔다.

공장과 산업체들, 그리고 과도한 동물 사육에서 발생한 심한 정도의 유해물질 오염으로 인해 숲지역은 거대한 면적에 걸쳐 심한 손상이 발생했는데, 그 일례로 에르쯔게비르게(Erzgebirge, 독일 작센과 체코 사이에 위치한 산맥 이름) 지역의 SO₂-손상을 들 수 있다. 1992년 산지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지역의 현저한 손상 비율은 34%로 북서독 지방이나 남독 지방보다 높다.

9.1.4 1949년 이후의 토지 개혁과 소유권 박탈의 잔재

소위 “민주적인 토지 개혁”이란 토지 개혁과 1949년 이후 나타난 토지의 소유권 박탈 문제의 해결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체들을 원상 복구시키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소유권 귀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진행 과정과 법규들에 대한 지식이 특히 중요하다.

소유권 박탈의 결과 1950년까지 전체 토지의 1/3에 해당하는 약 330만 헥타의 농경지와 산지가 국영 토지 재산으로 넘어갔다. 이중에는 총 266만 헥타에 해당하는 11,517개의 개인 소유 농경지(주로 100 헥타 이상의 토지 소유)도 있었다. 메클렌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에서는 많은 소유권 박탈 작업이 종종 토지 소유주와 그 가족들을 퇴거, 추방시키는 일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재분배되지 않은 농장과 토지들은 지속적인 황폐화의 운명에 놓였다.

국영 토지재산으로부터 56만명의 농업 노동자, 토지가 없는 농민들, 신이주자등 수혜자들이 약 210만 헥타의 토지를 분배받았다. 분배된 토지의 3/4에 평균 8 헥타 크기의 21만개의 새로운 농민 경제가 형성되었는데, 이중 55%는 구 농업부문 종사자에게, 45%는 동부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에게 분배되었다. 1952년까지 이 새로운 농지의 8만개는 수익성 부족, 경작자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다시 해체되었고, 토지는 국영 토지재산으로 다시 넘어갔다. 약 100만 헥타, 그중 50만 헥타의 농지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로 남았다. 이중에서 근본적으로 약 500여개의 국영 농장이 교습 농장, 시범 농장, 그리고 공급 농장의 형태로 형성되었다.

1952년부터 강제 집단화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1952년 7월 12일자의 인민 재산 안정화 규정에 의한 제 2차 소유권 박탈 물결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규정한 인도(引渡)의무 등을 지킬 수 없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한 압력을 받아 경작을 포기한 소유주들, 서독으로 도망간 소유주들 또는 국경지역으로 이주를 강요받았던 소유주들의 농지가 그 대상이었다. 1953년말까지 총 7만 헥타 상당의 2만 4,211개 업체에 대해 소유권 박탈이 있었다.

소유권 박탈과 함께 토지 소유주의 추방은 마을 주민들의 인력 구성과 건축·환경 상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많은 수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갔다. 대규모 경작을 위해 모든 경계 표시와 농촌을 구성하는 여러 풍경요인들이 사라짐으로써 농촌의 모습은 큰 변화를 겪었다.

많은 농지와 그 농지의 개간에 있어 소유권에 따른 귀속의 부재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많은 토지 소유주들과 그 상속자들이 농지가 있던 장소를 알아내기가 힘들며, 소유권 입증 작업은 토지 대장의 부재로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 게다가 토지개혁에 의한 경작지들은 소유권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규에 맞게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9.2 1990년 이후의 농업 발전

9.2.1 농업 정책의 목표

1993년 10월 3일부터 서독의 농업 정책의 주요 목표들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발전과 기존의 출발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 상황, 노동 상황, 환경 상황이 농촌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련의 농업정책적인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

다음과 같은 조치들은 옳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 반드시 실현해야 할 농업 기업 해체 과정(Entflechtungsprozeß)을 법규를 통해 지원
- 농업 생산을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게 함
- 지원 프로그램들을 생산력이 있는 업체 구상을 기초로 실행에 옮기고 환경에 부담이 적은 경작을 실시
-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가격 하락 및 기업해체상의 어려움을 해결
- 사회 보장 조치를 통해 구조 조정 과정을 측면 지원

농업 정책상의 주요 현안은 효율적이고, 시장 지향적이며, 환경 부담이 적은 농업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는 개별 업체로서 주업 또는 부업 형태, 협업적인 기업 형태 그리고 다른 법적 형태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사적인 소유권의 형성은 중요하다. 사유 재산의 자유로운 사용과 기업적인 행동의 전개는 경쟁력있는 농업 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재설립자 및 새로운 설립자들도 이들의 특별한 출발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기에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체제 전환 과정을 진척시키는데 있어 특히 효율적인 경영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과 관련된, 농업 육성적인 요구들을 특별히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들을 추구하고 있다:

- 다양한 구조를 가진 농업, 식품 경제의 육성
- 농업 기업의 재설립 또는 신규설립에 있어 장애 요인의 제거
- 농업 구조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계약적으로 적합한 형태로 국민 소유 토지와 업체들에 대한 관리 실시
- 판매 구조의 개선과 집중적인 지원
- 고수준의 생필품 및 소비자 보호의 보장

9.2.2 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 기초

통일조약을 통해 원칙적으로 농업 부문의 연방 법률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이로써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와 동일한 법적 환경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물론 체제 전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연방 법규들은 단지 사정에 따라 적용하고 이제까지 동독 지역에서 적용되어 오던 법규들을 우선은 계속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무엇보다 농업 구조 조정법, 농업생산협동조합법(LPG-Gesetz), 소유권 이전 및 생산 협동 조합, 조합원, 기타 주민에 대한 인민 소유 경작지의 임대에 관한 법 등을 들 수 있다.

9.2.2.1 농업 구조 조정법

동독의 인민 회의(Volkskammer)가 의결한 1990년 6월 29일자 농업의 사회적, 환경적 시장 경제로의 구조적 조정에 관한 법 - 약칭 농업 구조 조정법 - 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재회복하고 보장하며 다양한 구조를 가진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이 법은 무엇보다

기존의 농업 기업을 해체하고, 동시에 이를 다른 법적 형태, 단체의 형태로 만드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농업 생산 협동 조합(LPG) 조합원들의 조합 이탈을 규정하며, 자유로운 토지 교환과 토지 제도 정비 절차의 실시를 가능하게 해 준다.

물론 원 법안은 시행 과정상 충분히 정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어긋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하원(Bundestag)에 의해 근본적으로 개정된 1991년 7월 3일자 농업 구조 조정법(LwAnpG)은 구조 조정 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법적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1991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법적 형태로 전환되지 않은 농업 생산 협동 조합들은 원칙적으로 이 개정법에 의해 해체되었다. 동 개정법은 또한 질서 정연한 형태의 재산권 논쟁도 용이하게 해주며, 토지 소유주의 법적 지위도 개선시켜 준다. 동 법은 또한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농업 생산 협동 조합(LPG)에 대한 재산권 청구권의 확정과 실행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농업 생산 협동 조합 지도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명확한 규정들이 확정되었다. 이같은 규정들은 경솔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정부내 최고 담당 관청은 이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농업 생산 협동 조합(LPG)-후속 기업들의 경영에 대해 정사(精査)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9.2.2.2 소유권 규정 및 재산권 규정

농업 부문에서도 중요한 소유권 및 재산권 문제에서는 1949년 이후의 소유권 박탈, 구소련 점령법 및 점령고권의 기초에 의한 소유권 박탈(1945년-1949년 기간), 그리고 강요된 소유권 박탈인 이른바 광역단체 임대계약(Kreispaachtvertrag)들을 상호 구분해야 한다.

1949년 이후 소유권을 박탈당한 농림업체들 또는 현존하는 그 업체의 잔재들과 관련해서는 재산법 규정들과 기업 재반환 규정이 적용된다(이에 관

해서는 제 4장 IV.2 부분 참조할 것).

사안에 따라 소유권을 박탈당한 재산 가치가 실질적인 이유나 법적인 이유에서(예를 들면 도로 건설이나 제 3자의 정당한 취득) 재반환(Rückgabe)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전을 통한 보상(Entschädigung)이 이루어질 수 있다(제 4장 IV.3 참조).

재산법 규정에 따르면 특히 “서독으로의 도주자”(Republikflüchtige)들의 농업, 임업 부문의 재산에 관한 국가 관리는 폐지되거나 늦어도 1992년 12월말까지 법에 의거 종료되어야 한다.

점령법 또는 점령 고권에 기초한 소유권 박탈(1945년-1949년 기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949년 이후 취득된 소유권 박탈의 경우와 같은 종류(금전에 의한 보상)와 규모의 보상 청구만이 인정된다(이에 대해서는 제 4장 IV. 2 부분 참조). 그러나 토지개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당시 인민 소유 재산의 농지 평가를 위한 구상의 틀속에서 토지구입 프로그램이라는 규정이 있다(본장 9.3.6을 참조할 것).

토지 개혁의 과정에서 새로운 거주자들과 소규모 농장 소유자들에게는 이들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경지가 이전되었다. 이같은 형태의 노동 소유권(Arbeitseigentum)은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없었고, 상속도 불가능했다.

이같은 제한들은 1990년 3월 6일자 토지 개혁으로 생겨난 토지의 소유주로서의 권리에 관한 법에 의해 철폐되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누가 계속해서 사용권이 있는 소유주인가가 불명확했는데, 그 이유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이 토지 관련 서류에 아주 불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었거나 이를 재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民法(BGB=Bürgerliches Gesetzbuch) 도입법은 1990년 3월 15일자로 법의 발효와 더불어 토지 대장에 권리자로 등재되었거나 그 유산을 공유한

자연인(自然人)이 법에 의거 소유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이 같은 소유주에 대해 과거 동독의 소유권 변경 규정에 의해 주로 권리를 보유한 자(예를 들어 보다 후에 노동 소유권의 형식적인 지정이 있는 경우)는 채권법에 따른 소유권의 무보상 이전 청구권을 갖는다. 이 법규의 제정과 더불어 토지 개혁으로 생겨난 해당 토지들의 즉각적인 거래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었고, 동시에 미해결 재산권 담당 관청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수많은 농업 기업의 소유자들은 농업 생산 협동 조합과 조합원 관계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업체를 현존하는 재고 목록 또는 없어진 재고 목록과 함께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해야 할 의무를 졌었다. 이같은 형태의 사용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박탈이라는 틀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해 각 광역단체의 의회와 체결한 “광역단체 임대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농업 구조 조정법 제51조에 의해 이 “광역 단체 임대 계약”은 늦어도 1991년 7월 20일까지 해지되어야 했으며, 구소유주에게는 자신들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이 재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유주들은 그들이 제출한 목록들이 상실되었거나 그들의 농업 기업들이 수리 부족 등으로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제 광역단체 임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 구조 조정법이나 1993년 3월 31일 연방 내각이 의결한 과거 몰수재산 보상 및 조정 법률(안)도 이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 규정이나 조정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광역 단체 임대 계약의 피해자들은 그들의 보상 청구권을 법적 계승자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제출하고 있다. 많은 소유주들이 소송 과정에 돌입했다. 한가지 소송은 그 사이 연방 법원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법적 승계자 문제와 관련 연방 법원의 원칙적인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청구권에 대해 공공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연방이나 주정부, 광역 단체들은 구동독이나 구 광역단체 의회의 법직 계승자들이 아니다.

9.2.3 구조 변경

1990년, 1991년중 동독 농업기업의 3/4이 현저히 작은 규모의 협동 조합, 사단법인(Personengesellschaft) 형태, 재단법인(Kapitalgesellschaft)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개별농의 수는 1991년 4월 이후 약 9,000개에서 1만 7,8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몇몇의 재설립자 및 신규 설립자들이 협력하여 그 수가 4배로 늘어난 사단 형태의 농업 기업들도 대형 농업 기업들을 해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2년 가을까지 2만 2,114개의 업체가 형성되었다(부록 Nr. 160 표 참조). 개별농 중 전업농 형태의 5,958개 기업들의 업체 평균 크기는 134헥타의 경작지였고, 부업 형태의 8,180개 기업들의 평균 경작지 면적은 17 헥타였다. 1,253개의 사단(社團) 형태의 기업들은 평균 423헥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개별농 중 2,561개 업체는 원예, 1,121개 업체는 담수 어업과 기타 부문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별농과 사단 형태의 농업 기업들은 총 28.4%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3,041개의 법인(法人) 형태의 기업들(이중 1,433개는 등록 조합들, 1,183개는 유한회사 형태, 425개 업체는 기타 법인 단체임)의 평균 경작지는 1,235헥타이다. 소와 젖소 보유고의 약 80%, 돼지 보유고의 85% 이상을 법인 형태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과거 동독 농업 부문의 과도한 노동력 고용은 이미 초기에 정리되었다. 1990년말경에만 해도 59만명이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1991년 그 수는 30만명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노동력 감축은 사회적, 노동 시장 정책적 조치들에 의해 광범위한 지원을 받았다. 노동력 감축은 연금 상태로의 돌입, 조기 퇴직 연금의 청구, 다른 경제 부문으로의 이전 - 여기에는 농업 이외 업체들의 분리 작업도 상당 정도 기여했음 -, 고용 창출 조치(ABM), 직업 재훈련 조치, 실직(失職)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1992년 여전히 20만 8,000명이 농업 부문에 종사했는데, 이중 6만 5,650명은 자연인 운영 업체에, 14만 2,300명은 법인 운영업체에 종사했다. 노동력 투입 정도(자연인 농업 기업의 경우 100헥타당 4.8인, 법인 농업기업의 경우 100헥타당 3.8인)는 구서독 수준 보다 낮다. 현재 약 7만 3,000명의 노동자들이 농업 및 원예 부문 고용창출조치(ABM)의 수혜자이다. 농업 부문 단축 조업자의 수는 1993년 중반 8,200명이었고, 농업 직업 그룹 중 실직자 수는 8만 600명이다.

농업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 작업은 식품 산업의 기업체 수와 종사자수의 격감, 식품 부분 수공업의 강화 및 신규 설립을 초래했고, 생필품점의 판매망이 확대됨에 따라 농지와 고용이 감축되었다.

구동독 농업 부문의 소득은 국가의 확고한 가격 지원을 받은 결과 상당히 높은 정도를 유지했다. 1989년 농업 부문의 생산은 289억 동독 마르크를 기록했다.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의 결과로 진행된 시장 상황과 가격 하락에 대한 적응은 생산과 가치 창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90/1991 회계연도중 동독 농업 부문의 총 가치창출은 14억 마르크(DM)를 기록했다.

1991/1992 회계 연도중 총 가치창출은 선급부가창출의 상당한 절약으로 생산가가 다소 낮아진 가운데서도 39억 마르크로 증가했으며, 동독 지역 총 가치창출에 있어 농업 부문의 비중은 1.3%였다. 식물 생산품의 판매 대금은 뚜렷이 상승한 반면 - 여기에는 이미 단기간에 실시된 구조 조정 조치의 결과가 나타났음 - 생산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물 생산품의 판매 금액

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1991/1992 회계 연도에 대해 실험용 부기(簿記)에 의해 조사한 경영 결과를 보면 구조 조정 작업이 경영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최초의 경향들이 나타났다: 즉 전업(專業)과 사단(社團) 형태의 개별농들이 평균적으로 이미 상당한 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부록 Nr. 161 표 참조). 이같은 결과들은 주로 업체당 규모가 큰 경지 면적, 저 노동력 투입, 경작 비용의 대폭 절감 등에서 나온 것이며, 광범위한 국가의 원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인(法人)들은 1991/1992 회계 연도중 주로 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공동 소유자인 경우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과 봉급을 지불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구조 조정 작업과 더불어 재산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줄어 들었다.

대부분의 농업 기업들의 경우 확충과 구조 조정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몇년간 자산, 자본, 수익, 비용, 소득의 수준과 관련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9.2.4 과거 인민 공유 토지 및 기업의 민영화

신탁청 산하 토지의 매각 작업은 3단계에 걸쳐 조심스럽게 진척되었다(다음 9.3.6 부문 참조). 1단계에서 이른바 경작 보고와 단기 계약을 장기 임대 계약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2/93 임대 연도에 대해 현재까지 다음 계약들이 완료되었다:

- 17만 8,000 헥타에 대한 1,410개의 장기 임대 계약
- 74만 1,000 헥타에 대한 6,067개의 단기 임대 계약

약 3,000헥타의 토지가 상업 건축물 또는 주택 목적, 기타 비농림업 부문

에서의 이용을 위해 매각되었다.

1991년 7월 3일 농업 구조 조정법의 개정과 더불어 약 70만 헥타의 생산 조합 산지가 산지 소유주들에게 반환되었다. 25만 헥타에 해당하는 구 지방 자치 단체 산지의 반환은 1992년에 이루어졌다. 신탁청은 BVVG (신탁청 산하의 부동산 평가 관리회사)와 더불어 1945년 이전과 1949년 이후에 소유권을 박탈당한 지방 자치 단체, 주, 민간 소유 산지의 재반환후에도 남아 있는 구 인민 소유 산지를 민영화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약 800개의 부수업체, 2000개의 주택을 포함 79개의 국영 산림 기업 자산이 신탁청으로 이전되었다. 법규에 따른 산지의 경영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부수업체들은 주정부에 이관되었다. 이 부수업체중 약 1/4는 1991년 중반에 설립된 산림 회사(Forstbetrieb-GmbH)에 매각되었다.

식품 경제(제 1 가공 단계)의 민영화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 신탁청 본청 농림 기업그룹에 있던 317개 식품업체중 현재까지 196개 기업, 233개 기업 일부와 지상 건물을 포함한 토지가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420억 마르크의 투자 동의, 2만 1,700명의 일자리 보장을 약속받았다. 신탁청 지사들에 의해 50개 기업이 더 민영화되었으며, 3개 업체는 자치 단체의 소유로 이관되었고, 6개 업체는 재반환되었으며, 46개 업체는 해체되었다. 6개 기업과 10개 기업 일부가 구 기업운영인에게 매각되었으며 (기업내 경영인에 의한 경영권 인수: Management-Buy-Out), 8개 기업은 기업 외부의 인사에게 매각되었으며(Management-Buy-In), 17개 기업 및 기업 부분들은 외국인에게 매각되었다. DM-개시 대차대조표의 확정과 더불어 신탁청은 약 6억 3,000만 마르크의 구부채를 떠맡았다. 현재 남아있는 16개 기업의 종사자수는 800여명을 헤아린다. 그러나 민영화 작업은 올해 중 완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필품 업체의 민영화는 1992년중 대부분 완결될 수 있었다. 842개 기업 중 약 62%가 민영화되었으며, 15%는 신탁청 지사들에 이관되었고, 23%는

해체중이거나 임대되거나 합병되었다. 구매자들은 계약을 통해 총 73억 마르크의 투자 동의를 약속했으며, 4만 2,000개의 직장에 대한 장기 고용을 보장했다.

9.3 연방 정부의 대책

9.3.1 재산 분규

연방 정부는 처음부터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구조 조정 작업과 과거 조합원들의 소유권 관계의 해명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재산 논쟁이 합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많은 재설립자들에게는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 농업 구조 조정법은 필요한 수단들을 제공해준다. 시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물론 주정부, 농업 직종별 단체들의 집중적인 도움에 의존할 수 있다.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연방 정부는 처음부터 구조 조정 과정을 지원했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누구나 알기 쉬운 특별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들을 인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연사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앞으로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는 단일한 법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 기능도 상당한 정도로 부과받고 있다.

9.3.2 소유권 관계의 재정비

농촌 풍경을 결정하는 거대한 농경지를 보고 현혹되어 그것이 여러 소유주들의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분산 소유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한때 개발 작업을 하기도 했던 원래 부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미래의 농업 구조적, 사회 간접 시설적, 환경적 관점을 만족시켜 주는 재정비 작업이 요청된다. 농업 구조 조정법 제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한 소유권 관계의 확정 및 재정비 절차(경지 정리)를 통해 토지 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주어졌다. 이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 실시된다. 일반적으로 농업 구조 조정법에 의한 토지 정비는 성공적인 구조 조정 작업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이 과제 of 긴급성과 규모, 늘어나는 갈등 사례로 볼 때 가능한 신속한, 필요한 경우 과도기적으로 전권을 지닌 토지 소유 규정이 요청되는데, 이는 농업 구조 조정법 제61조 a에 의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경지 정리 관청은 최종적인 소유권 규정이 완성될 때까지 토지 소유주에게 이들의 토지를 지정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사용 관계는 재정적인 지원 요청을 위한 증명 의무의 전제 조건들이 될 수 있다.

새로 설립된 경지 정리 담당 관청들은 전문 인력의 부족과 재정적인 곤란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아주 능률적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몇가지 절차들이 진행되었고, 한가지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다. 이는 특히 분리된 토지소유와 건물소유의 결합을 위한 중요한 절차들에도 해당되는데, 이같은 절차는 20만개의 개인 주택과 7만개의 생산조합건물들이 타인의 토지위에 세워져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지정리관청들의 핵심업무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구 인민소유경지의 민영화, “독일통일” 교통계획, 그리고 손상된 농촌풍경을 경지정리를 통해 생태학적으로 복구하는 작업이 실시될 수 있다.

9.3.3 재정 지원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농업부문구조 조정작업을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농업부문 예산에는 총 158억 1,200만마르크가 배정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90 (기집행) 48억 9,500만 마르크

1991 (기집행) 42억 3,100만 마르크

1992 (기집행) 23억 5,500만 마르크

1993 (미집행) 23억 700만 마르크

1994 (미집행) 20억 2,400만 마르크

이 지출액 중 상당 부분(53억 마르크)은 구조 조정 지원금이다. 동 지원금은 가격 붕괴의 조정 지원금, 자연적인 입지상의 불리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지 조정을 위한 보조금, 지불 능력 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연방 정부는 시장 질서의 기능, 구조 조정의 지원, 과도기적인 문제들의 극복을 위해 25억 9,600만 마르크 규모의 국고를, 예를 들면 제 3세계 수출, 국가의 간접 구매 등을 통한 잉여물을 신속 처리하는데 투입했다. 아울러 이미 1990년 7월부터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농경지의 경작을 중단하거나 조방(槽放)하는 방안이 제공되었다.

9.3.4 구조 조정 지원

1990년 7월 6일자의 구동독 농업 부문의 사회적 시장 경제로의 구조적, 사회적 조정을 위한 법(지원법)과 더불어 새로운 농업 구조로의 전환을 예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동 법은 특히 창업과 업체 구조의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있는 가족 기업의 창출, 생산 구조 및 시장 구조의 개선, 노동력의 방출시 사회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C는 능률 규정(Effizienzverordnung)이라는 틀 속에서 농업 구조 조정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정을 발령했다. 동 규정에 의거, 특히 동독 지역에는 농업 부문에 있어 주업 형태로 가족 기업의 재설립과 현대화, 법인 형태의 농업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목적의 지원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1991년 1월 “농업 구조 및 연안 보호의 개선”(GAK)을 위한 공동체 과제라는 계획이 동독 지역에 도입되었다. 농업 구조 및 연안 보호를 위한 전독

일 차원의 최초의 위원회는 개별 기업 지원 및 시장 구조 개선 부문에 있어 기존의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많은 수의 특수한 지원 원칙들의 전환을 결의했다.

구조 조정 지원은 투자 보조금, 저리의 융자, 공공 대부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보증을 얻어내는 수단이 처음으로 GAK의 틀속에서 사용되었다. 그 사이 지원 조건은 개선되었다. 특히 1991년 일반 원칙을 여러 가지로 보완한 결과 지원을 동독 농업 구조의 여건들에 맞게 조정하고, 급속한 변화를 가져 오는 일이 성공을 거두었다.

개별농에 대한 투자 지원은 1992년, 1993년중 평균 7억 8,000만 마르크로 전체 기금의 41%를 차지, 지원의 중점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1992년 처음으로 보장된 불리 지역에 대한 2억 9,000만 마르크의 조정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경지 정리, 마을 재정비, 농로 건설등 업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들은 개별농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의 전제를 이루기도 하고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동 기간중 약 20%가 수리 경제 및 인공 재배 기술적인 조치들에 투입되었다(3억 6,700만 마르크). 이외에도 마을 개혁을 위해 약 1억 8,800만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시장 구조 개선 영역에서는 현대적인 도살장, 낙농장, 감자·야채·과일 등의 가공업체 설립에 1991년-1993년 기간중 40억 마르크 규모의 투자 중 12억 마르크 상당의 국고 지원과 6억 마르크의 EU 지원이 있었다. 또 다른 조치로는 1992년부터 시장 구조 조정법에 의거 생산자 협회에 대한 창업 및 투자 조치에 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9.3.5 구채무에 관한 규정

동독의 농업 기업들은 1990년 7월 1일 기준 약 76억 마르크의 구부채를 안고 있었다. 기업들이 상당한 구조 조정 요구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하면,

이 구부채들은 동독 지역의 농업 생산을 보존하는데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연방 정부는 14억 마르크 규모의 재원으로 통일조약 제25조 3항의 “신탁청의 매각 대금을 경우에 따라 농업 기업의 부채 상황 조치”에 투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활용했다. 부채 상환 조치의 실행을 위한 실제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은 “농업 기업의 부채 상환을 위한 작업 지침”으로, 이에 따르면 신탁청은 개별 경우에 있어 독자적으로 상환액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신탁청은 920여개의 부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의 총액이 14억 마르크가 넘어설 것이 예상되므로, 접수된 신청에 대해 상환 비율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신탁청의 부채 상환 작업은 대차대조표에 의한 구부채의 경감에 의해 보충되는데, 이의 법적인 근거는 DM-대차대조표법 제16조 3항이다. 대차대조에 의한 부채 경감을 위한 작업 지침에 따라 각 구부채 제공 은행들은 생산 협동 조합 후속 기업들과 부채유예협약(Rangrücktrittsvereinbarung)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은행측이 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청구권들을 상환순위에 있어서 부채 경감을 받는 해당 기업이 지고 있는 모든 다른 채무보다 뒤에 둔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신용계약상 효력이 있는 상환형식을 무효화시킨다는 점에 합의한다. 그 대신 경감된 구 부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익의 일부에 기여하도록 사용될 필요가 있다(개선 협약).

대차대조에 의한 부담 경감은 따라서 부채 상환이나 상환 면제가 아니라 지불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1,500개의 부채 유예 협약이 체결되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39억 마르크에 이르는 구 부채가 상환 또는 대차대조에 의한 부담 경감의 대상이 되었다. 연방 정부는 부채 정리를 위한 이 두가지 규정이 구조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

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구부채 정리 작업의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는 기업의 재정비 작업이다.

9.3.6 과거 인민공유 토지 및 기업의 매각

신탁청이 보유하고 농지(農地)는 190만 헥타이다. 이중 60만 헥타는 주정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1949년 이후 소유권을 박탈당해 재산법에 따라 재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구소유주들에게 반환되었다. 약 130만 헥타가 민영화되어야 하는데, 이 토지들은 근본적으로 토지 개혁 기간중 소유권 박탈을 통해 생겨난 것들이다(앞의 9.1.4 부분 참조). 이외에도 신탁청은 195만 헥타의 산지(山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약 77만 헥타가 민영화되어야 한다.

민영화의 법적인 기초는 신탁법과 1992년 6월 26일 신탁청 행정위원회가 공포한 지침이다. 이 지침에 기초하여 1992년 가을 실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상론(詳論)들이 마련되었는데, 이 작업에는 연방 정부, 신탁청, 동독 주정부 농업 부처들, 그리고 독일 연방 의회 연합 정파의 “소련 점령 치하 및 동독 재산권 문제” 소위원회가 참여했다.

이 논의의 결과 농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 구상이 생겨났는데, 이 구상은 다음의 3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1) 신탁청 산하 토지의 장기 임대

농지들은 이를 임차한 농업 기업이 안정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체로 12년간 임대되어야 한다.

해당 농지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신청자(혹은 기업 운영자)의 직업적인 자질을 포함, 신청자의 경영 구상을 기초로 결정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임대 이자가 제안되고, 또한 동일한 가격의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농경 재개인(토지 개혁의 희생자들 또는 구 자영농이나 그의 상

속자들), 1990년 10월 3일 기준 현지 거주 농경신설인, 그리고 자신들의 임차 신청 토지를 이미 경작하고 있는 농경신설인들이 생산 협동 조합(LPG)의 후속 기업들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생산 협동 조합 후속기업들이 두번째로 우선권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1990년 10월 3일 기준 현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아직까지 신탁청 토지를 임차하지 않은 농경신설인들이 세번째로 우선권이 있다. 농경재개인과 신설인간에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이들이 제시한 경영 구상이 같은 등급의 것일 경우 토지 개혁 당시의 희생자들이 “이해(利害)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기존의 기업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경작하고 있던 토지를 박탈당함으로써 심각한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

임차인들은 스스로 농업 기업을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개인적으로 근거가 충분한 경우 과도기간 동안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농업 기업 또는 정주(定住)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들은 취득 선택권을 갖게 된다.

(2) 토지 취득 및 정주 프로그램

1995/96년부터 토지 취득 프로그램에 의해 토지 개혁의 희생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지불하고 지상 건물을 포함한 신탁청 토지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현품(現品) 형태의 보상은 가능한 한 신청자의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어야 하지만, 금전 보상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총체적인 가치 조사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취득자가 20년내에 해당 토지를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매각 대금은 신탁청에 지불해야 한다. 정주(定住) 프로그램에 의하면 제 1단계에서 신탁청 토지를 임차한 농업 기업의 재설립자와 1990년 10월 3일 기준 현지 정주자는 해당 토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체 경영 면적중 자기 토지의 비율이 50% 이하인 농업 기업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한선도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토지 개혁 희생자들은 토지 취득 프로그램에 의한 토지 취득외에도 정주 프로그램에 의해 토지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제 3자가 해당 토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하기 원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임대되어 있는 토지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경우에는 자가 경영의 의무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은 현저히 줄어들어야 한다.

(3) 기타 경작지의 매각

토지 취득 프로그램이나 정주 프로그램의 완료 후에도 남아 있는 토지들은 시가로 민영화되어야 한다. 이 구상은 과거 인민소유 부동산과 임야에 대한 매각 원칙에 의해 보완되어지는데, 이를 통해 그같은 영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진다.

9.3.7 환경 부문의 조치

통일 이후 환경 보호적인 농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 화학 비료법, 식물 보호제법, 수분(水分) 평형법, 연방 유해물질 방출법, 연방 자연보호법 등의 도입. 유해물질 방출 보호법의 경우는 과도기 규정이 적용됨.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적인 에너지 획득, 수리(水理)경제적·재배기술적 조치들(예를 들면 새로운 배수 및 정수 시스템의 건설, 관개시스템의 확충, 토양 침식의 방지), 산림 부문의 조치들(예를 들면 再植木, 부식 방지 식목) 등과 같은 특별한 장려 조치들.

이같은 조치들 및 그리고 초대형의 기업 구조를 지닌 동물 사육 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들은 동독의 환경 상황을 뚜렷히 개선하는데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해물질 방출법 분야에도 전 독일 지역에 걸쳐 단일한 환경보호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1993/94년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서 EU-농업 개혁에 따라 의결된 바 환경보호적인 농업 생산을 위한 지원 조치들도 각 국별로 적용되어 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4 신연방주에 대한 EC-농업 개혁 관련 특별 규정

EU는 공동의 EU-농업정책을 입안하면서 신연방주 지역 농업 부문의 근본적인 구조 조정 과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확충하는 작업이 EU-농업 개혁에 의해 방해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농업 구조적인 상황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동독 농업 경제의 특수한 요구들을 특별히 고려한 일련의 규정들을 관철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소고기 및 양고기 부문에서는 개별 참조연도에 따라 동물 수를 제한시키는 대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물 수를 공정하게 측정해 전체 상한선을 확정했다. 업체당 90마리로 정해 놓은 상한선이 구동독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상한선을 이같이 유리하게 정해 놓음으로써 동물 보육고를 재확충하는데 충분한 활동폭이 주어졌다.

곡물(사일로용 옥수수 포함), 식물성 기름 종자, 단백질 식물의 경우에는 전체 경지 면적이 357만 헥타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구입 연도의 실질적인 재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해진 것이다. 가격 보상 및 경작 중지 보상금으로는 - 과거의 데이터(1986년-1990년)에 의해 정해지는 평균 수확과는 무관하게 - 서독에서와 동일한 수확 수준(곡물 55.6 dt/ha, 평지 식물 31.3 dt/ha)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경작 중단 보상금이 경작 업체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것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연방 정부는 다양한 규정들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연방주 농업 부문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0. 대외 경제 : 코메콘(COMECON)에서 자유 국제 무역으로

10.1 화폐·경제·사회 통합 이후의 동독 대외경제의 발전

과거 동독의 대외 경제 관계는 동구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상호 경제 원조 위원회”(COMECON)의 회원국이라는 점에 의해 결정되었다.

코메콘 국가들과의 장기적인 협력 계획 및 공급 계획을 통해 동독의 생산 및 교역 구조는 과도하게 동구와의 거래를 목표로 형성되었는데,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독 수입의 67%(152억 마르크), 동독 수출의 79%(301억 마르크)가 동구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서방 선진국과의 교역은 동독 수입의 25%, 수출의 13%를 차지했다.

화폐 통합이 효력을 갖게 되고 동독의 계획 경제가 사회적 시장경제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이행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동독이 코메콘 국가들과 맺은 가격 체제, 재정 체제, 결제 체제가 해체되면서 동독 기업의 대부분이 서구의 경쟁자들과 경쟁할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동독 기업들은 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은 물론 효율적인 교역 기술, 마케팅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로써 동독 경제는 동구의 전통적인 판매시장들, 특히 구소련 지역에 그 생존을 의지했다.

시장경제적인 환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 시장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는 국가조약(제13조)과 통일조약(제29조)에서 이 지역시장으로의 동독의 교역 관계에 있어 신뢰 보호를 약속했다.

1990년 말까지 이전 루블화에 의한 결제시스템이 존속되고 동구 유럽에 대한 동독 기업의 수출에 20억 마르크의 지원금을 지불하자 1990년에는 동구로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는 등 동독의 전체 수출에서 동구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를 어느 정도 지연(1989년보다 7% 감소)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1990년중 동독의 수입은 전년비 44% 감소한 229억 마르크를 기

록했는데, 이중 유고와 알바니아를 포함한 구동구권으로부터의 수입은 152억 마르크로 무려 45% 감소를 보였다. 그 결과 1990년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으로 인한 동독 이전루블 잔고는 100억 이전루블이었는데, 이를 1 TR (이전 루블)= 2.34 DM 으로 환산할 경우 약 236억 마르크이다.

동독 이전루블 잔고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무엇보다 동독 지역의 급격한 생산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의 감소와 가능한 한 서독 상품 구매를 시도한 동독 기업들의 구매 정책의 변화에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하반기중 서독 지역으로부터의 동독의 구매는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한 135억 마르크에 이르렀다.

동독 기업들의 복잡 다단한 체제 전환 과정 및 구조 조정 과정, 그리고 중동부 유럽 지역의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변혁은 전체적으로 동독의 대외 교역량이 크게 줄어들게 했다. 1992년중 동독의 대외교역량은 231억 마르크로 1990년에 비해 62% 줄어들었는데, 이중 동구와의 교역은 120억 마르크로 73%나 줄어들었다. 수출은 76% 줄었고 수입은 69% 감소했다(그러나 한편 동독의 동구교역량이 동독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수출은 36억 마르크로 11%, 수입은 71억 마르크로 24%를 차지하여 일반적으로 동독의 대동구 교역이 붕괴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동 기간(1990년-1992년)중 전체 독일의 대외교역량에서 동독의 대외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은 4%에서 1.5%, 수출은 5.6%에서 2% 낮아졌다. 그러나 이 비중은 동독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노동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0.2 대외 경제에 대한 지원

연방 대외 경제 정책의 명확한 목표는 신연방주를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동구 교역은 이 어려운 과도 기간중 동독 경제를 위한 중요한 지주(支柱)로서 계속 강력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 연방 정부는 특별히 동독 기업의 요구들을 고려한, 부분적으로는 한시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연방 정부의 대외 경제 지원 조치를 확대·수정했다.

특히 구소련 지역으로의 수출에 의존하는 동독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주요한 조치로는 헤르메스(Hermes)-보증을 들 수 있다. 기업들이 시장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1년말까지 완료되는 구소련 국가들과의 공급 계약에 대해 특별한 조건들을 보장해주었다.

한편으로는 독립 국가 연합(CIS) 국가들의 위협 상황이 더욱 강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에 있어 헤르메스 보증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 연방 정부는 1992년초 50억 마르크의 범위내에서 헤르메스-보증의 속행을 의결했다. 이 금액은 1992년 가을 완전히 소모되었다. 1992년 12월 40억 마르크의 보증금을 확보한다는 연속 규정이 결정됨으로써 대 CIS 수출 보증은 여전히 개별 경우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 부담액이 많아 동독 기업들만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프로젝트 재원 조달이나 상호 사업(건축물)을 헤르메스 보증기구의 보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연방의 수출 보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었다. 1993년 보증 금액은 소진 직전에 있다. 1994년의 CIS 보증에 관한 결정은 러시아가 지불 태도를 명확히 한 후에야 비로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 및 CIS 국가들과 이미 맺고 있는 무역관계 및 협력 관계를 이제 새로운 환경하에 전환시키고 계속 발전시키는 작업은 또한 경제계의 활발한 참여를 요구한다. 독일 전경련(BDI) 동구 위원회(BDI/Ost-Ausschuß)와 독일 상공회의소(DIHT)는 연방 정부의 권고로 1991년 7월 양측의 정보, 접촉, 연락파트너 등을 중개해주는 독일 경제 협력사무소를 개설했다. 연방 정부는 이 협력사무소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개별 외국시장에 있어 기회와 여건들에 대한 정보 및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쾰른에 연방 대외교역 정보처(BfAi)가 있다. 이 기구는 베를린에 지소를 설치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50여개 이상의 대외 무역 사무소(AHK)와 독일 경제의 파견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다. 동독 기업들은 이곳에서 서비스를 현재 일부는 무료로 또는 저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특수 지원 조치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1990년부터 매년 300만 마르크를 제공해왔다.

동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해외 무역박람회에 대한 지원의 틀 속에서 1991년 7월 1일 - 1994년 12월 31일 기간중 한시적으로 특별한 조건의 혜택들을 보장해주고 있다(참가 금액의 할인, 전시물, 박람회 관련 광고비, 여행 비용에 대한 보조금). 1992년말까지 1,000여개의 동독 기업들이 123개의 연방 지원을 받은 해외 박람회에 출품했는데, 이중 51개 박람회는 선진공업국들에서 열린 것이며, 42개는 중동부 유럽, 중국, 베트남, 그리고 30개는 개발 도상국 또는 신흥공업국에서 열린 것이었다. 동독 수출업체들의 주종은 기계 및 시설 제조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소비재 부문이었다. 이 특별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연방 정부는 해외 무역박람회 비목으로 1,100만 마르크를 제공했다(1991년 350만 마르크, 1992년 750만 마르크).

이같이 집중적인 대외경제 지원 정책, 그리고 서방 선진국들과의 새로운 경제 관계 확충 - 이는 효율면에서 우수한 서방 경쟁기업들과의 혹독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 을 위해 동독 기업들이 기울인 커다란 노력들이 첫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교역이 동독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수입은 1990년 24.8%에서 1992년에는 46.8%로 늘어났고, 수출은 1990년 13.4%에서 1992년 34.4%로 늘어났다. 1992년부터는 비록 소폭의 성장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수출입이 전년에 비해 절대적인 증가를 보였다. 수입은 39억 마르크에서 45억 마르크로, 수출은 44억 마르크에서 47억 마르크로 늘었다. 중요한 공급국 및 구매국은 네델란드, 이탈리아, 프랑스였다.

연방 정부는 현재의 조치들을 속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부 유럽지역의 판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독일 경제계의 파견사무소망을 확충(1993년 소피아와 브라티스라바에 새로운 사무소 개설)하거나 일부는 상호 대외무역사무소로 이관 작업(프라하와 부다페스트)을 하고 있다.

한편 중동부 국가들이나 CIS 국가들의 정치 상황과 어려운 개혁 작업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소득과 고용 창출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독 기업들이 서방의 판매 시장에 확고한 발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몇몇 해외무역사무소와 협력하에 판매 지원을 위한 목적성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동독을 세계 경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 특히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방 정부는 동독 주정부들과 신탁청과의 협의하에 외국 자본의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특히 베를린 소재 연방경제성 지부내에 “외국 투자가 안내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중점은 독일의 경제적 입지를 확보하고 홍보하는 작업이다.

11. 신연방주의 EC 예로의 통합

11.1 EC 규정의 적용

독일 통일과 더불어 EU-법은 또한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었다. EU-법의 약 80%가 즉시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동독 경제는 즉시로 공동체

시장의 모든 가능성과 잇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회원국 가입시 거쳐야 하는 장기간에 걸친 지리한 협상을 거치지 않고 EU-회원국이 되었다.

유효한 EU-법의 약 20%의 경우에 대해 독일은 신연방주 지역을 위해 예외적인 적용 또는 과도기 규정을 인정받았다. 1990년 12월 4일과 1990년 12월 19일 일련의 조치를 의결함으로써 몇몇 부문에 있어 동독 지역의 경제를 EU-법의 기준에 조정하는 작업이 규정되었다. EU 집행위는 해당 규정들이 자력 성장을 위한 지원으로서 잠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며, EU 공동체 시장의 기능이 이로 인해 가능한 한 침해받지 말아야 하고 또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걸었다. 산업 부문에서 특히 다음의 부문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생필품, 화장품, 유제품, 화학생산물, 약제, 건축 기계, 전기 기구, 섬유, 크리스탈 유리, 완제품 포장, 종자, 품종. 통일 이전에 동구 코메콘 국가들과 유고로부터 무관세로 동독 지역으로 반입된 물품들은 계속 무관세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물품들은 동독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특히 어업 정책, 농업 시장 규정 그리고 교통법, 환경법 부문에서 또 다른 예외들이 인정되었다.

11.2 EC 구조 조정 기금

EU-기준에 의하면 가장 미개발된 지역에 속하는 신연방주 지역에 대한 EU-재정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EU 구조조정기금의 투입이다. EU는 1991년-1993년 기간에 대해 60억 마르크의 구조 조정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경제구조 개선”이라는 공동체의 과제에 의해 제공되는 EU 지역기금의 재원은 독일내의 지원과 더불어 상공업의 촉진과 경제 관련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계획에 투입된다. 동독 지역에 대한 EU의 경제 지원은 경

제의 구조 조정에 있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유럽 사회 기금”(Europäische Sozialfonds)의 범주에서 제공되는 지원 재원은 동독 지역에 있어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개발하고, 이로써 지역적인 차원에서 노동 시장 구조 및 직업 교육 구조를 변화시키며, 장기 실직과 청소년 실직을 근절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 설립기금 및 보증 기금”의 재원은 농산물의 가공 및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 생활 조건 및 노동 조건의 개선 그리고 환경 오염 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주들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EU의 최고 지원 범주(“개발 후진 지역”)에 편입된다.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과 EU내 다른 저개발 지역의 동일시는 동독 지역에 대한 EU 보조금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동독 지역에는 1994년-1999년 기간 중 140억 ECU(약 270억 마르크) 구조 조정 기금 재원이 제공된다.

11.3 EC 농업 시장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동독 지역에는 1990년 7월 1일 EU 규정에 대폭 부합하는 시장 질서 체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1990년 8월 1일 EU와 동독간에 체결한 사실상의 관세 통합(de-facto-Zollunion) 형성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 동독 지역을 EU 농업 정책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농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 해당한다.

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물 부문의 과잉 생산을 철폐하기 위해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버터, 분유, 육류 등이 특히 동구지역 제 3세계 국가들로 수출되었다.

농업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부문 가족기업의 재설립과 현대화 지원, 법인체의 구조 조정, 시장 구조의 개선을 위한 과도기 규정들이 효력을 발생했다. 이 외에도 독일은 공동 농업 정책(Gemeinsame Agrarpolitik)으로의 이행을 기초로 소득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동독 농업부문을 EU의 생산 관계 및 시장 관계로 통합하는 작업은 별 장애없이 고속도(高速度)로 진행되고 있다. EU 농업정책의 개혁과 GATT 협정의 체결은 동독의 농업 부문에도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연방 정부는 이 과정에서 동독의 요구를 고려하는 규정들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이에 대해서는 IV장 9.4 부분 참조).

앞서 언급한 EU 집행위의 법규들에는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거나 시한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융통성 조항(Flexibilitätsklausel)이 들어 있다. 그러나 1990년 12월 위원회 결정들의 근본 원칙들은 폐지될 수 없다.

동구 교역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과정에서 독일은 이 규정을 활용, 199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동구로부터의 무관세 수입에 관한 예외 규정을 일년간 더 연장하는 신청을 냈다. 농업 부문과 환경 부문에서의 현재까지의 경험들을 기초로 독일은 이 부문들에서도 융통성 규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예외 규정 및 EU 구조 조정 기금의 투입을 통해 유럽 공동체는 동독 지역의 산업과 농업 부문의 구조 조정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실업율을 둔화시키려는 연방 정부 및 주정부 차원의 노력들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V. 신연방주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1. 교 통

1.1 1989년 당시의 상황

양 독일 국가간 교통 관계의 기초가 된 법규로는 4대 전승국 협정을 기초로 체결된 부속 규정을 포함한 국경 지역에 관한 통행 협정과 (서)베를린 통과 교통에 관한 협정이 있다. 두 협정은 1972년에 체결되었다.

이를 기초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통 부문은 여러가지 완화 조치들과 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경 통과 교통은 구동독의 여행 제한 조치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1988년에는 동독으로부터 서독 및 (서)베를린 지역으로 약 500만건의 여행이 있었는데, 이중 370만건은 연금생활자들에 의한 여행이었다. 국경 통과 화물 운송도 약 2,600만톤으로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국경 통과 교통을 위해 1,400 킬로미터에 이르는 동서독간 국경 지역에는 10개의 통과 도로와 7개의 통과 철도가 있었을 뿐이며, 베를린 교통을 위해 서는 단지 적은 수의 통과 노선이 있었을 뿐이다.

1988년에는 2,600만명의 여행자들이 (서)베를린 기차 통과 교통을 이용했다. 통과 도로에 대한 투자를 위해 당시 서독 연방 정부는 동독측에 1988년까지 거의 24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과거 동독의 교통 상황을 특징지우는 것은 계획 경제적인 지침들과 황폐한 인프라스트럭처였다. 교통 서비스는 - 개인 교통을 제외하면 - 거의 전적으로 인민 소유의 콤비나트들과 국영의 교통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국가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업체의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운수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교통 담당자들이 경제의 수송 수요에 적응할 수 있

는 능력은 거의 완전한 제약을 받았다.

동독 교통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철도에 우선권을 두었다는 것이다. 철도가 전체 국내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1988년 기간중 거의 75%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은 높은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철도의 효율성과 수송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며, 이같은 현상은 특히 1989년 하반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동독의 교통망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독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조밀한 편이었으나, 특히 질적인 면에서는 경제계나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주로 야심적인 정치적 투자 프로그램을 추구하다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설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정치적 투자 프로그램의 예로는 폴란드와 구체코를 통과하는 교통로와는 별도로 동독과 구소련(Klaipeda)간의 직수송을 보장해주는 무크란(Mukran)-연결 노선의 건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동독에서는 핵심적인 교통망은 과도하게 이용된 반면에 보수나 보존 조치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89년 14,000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동독 국영철도인 독일 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의 전체 구간중 17% 구간은 감속을 해야 운행이 가능했다.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62%, 철교(鐵橋)의 42%, 신호 장치의 86%가 정상적인 사용 기한을 초과했다. 또한 콘크리트 재질의 침목중 1/4이 알칼리 손상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했다. 간선 도로의 건축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서독 정부의 재원을 통해 비교적 보존이 잘 된 베를린 기차의 통과 도로의 경우는 예외였다.

차도 면적의 약 45%는 상당히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양 가장 자리에 있어야 할 정착용 차들을 위한 갓 길이나 중앙 분리 보호

대, 방음벽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동독에서는 중앙 분리대에 비상 호출 전화 장치가 설치되었는데, 그나마 이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속도로도 약 1/3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부대 시설이나 관리 시설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주 황폐한 상태였다. 교량들과 기타 기술적인 건축물들중 70%는 50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다.

동독지역의 수로(水路)는 주로 전쟁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수문(水門)과 방축 시설들은 50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으며, 이중 50%는 심지어 80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신속한 보충 수요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 수요에는 동독지역 교통 부문의 인프라스트럭처 수준을 서독의 보존 상태 및 확충 상태에 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된다. 1990년 평가에 따르면 이 보충 수요는 총 970억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동독의 공역(空域)은 우선은 군사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항공 노선은 유일한 국제 노선으로 북-남(北南) 노선(코펜하겐-프라하)이 있었고, 국내 노선으로는 베를린-쾨넨펠트에서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에어푸르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를 연결하는 노선만이 있었을 뿐이다.

동서독 국경을 통과하는 정기적인 동서독(독-독) 항공 노선은 연합국들의 권리와 의무때문에 결코 실현될 수 없었다. 특히 라이프찌히 박람회장으로 향하는 개별적인 비행은 구 체코를 경유하거나 앞에서 언급한 북-남 노선을 경유함으로써만 가능했다.

1.2 동서독 경계선 개방 이후의 긴급 조치

1989년 11월 9일에는 폭발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의 물결과 더불어 동서독간의 국경이 마침내 개방되었다. 개방 직후 즉각적인 조치들이 취해져 이미 1989년중에 국경 근처의 수많은 교통 연결로가 다시 차량 운행이

가능한 도로들로 변모했다. 약 200여개의 새로운 통과로들이 생겨났으며, 마침내 국경 통과라는 절차가 철폐되었다. 동서독 통과 및 교통 위원회는 협상을 통해 1990년 중반 즈음에 내륙간의 교통에 있어 모든 행정적인 장애물들(예를 들면 여권 소지, 계산 카드, 물품 소지 증명서, 지정 통과로)을 철폐했다.

1990년 1월 9일 동서독은 공동으로 “교통로(交通路)” 위원회를 가동시켰는데, 이 위원회의 중점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 끊어진 도로/철도의 연결 및 복구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 종종 열악한 수준에 있는 도로 또는 철로선을 보수하여 이미 확충되어 있는 교통망에 연결하는 조치
- 전독일적인 교통로 계획

1990년 5월 3일 양 독일 국가의 교통장관들이 합의한 긴급조치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철도에 대한 조치로는 중단된 선로(베를린 시내의 전철, 지하철 포함)의 복구 및 전철화 되지 못한 구간에 대한 긴급 조치
- 도로에 대한 조치로는 3가지 대형 계획(A 4 고속도로 Thüringer Zipfel, A 72 고속도로 Hof-Plausen, B 191 도로 Elbebrücke Domitz)과 130개에 이르는 국경 근교의 개별 조치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이미 1990년 5월 26일 선로 구간 아이헨베르크(Eichenberg)- 아렌스하우젠(Arenshausen) (Kassel-Halle를 잇는 일부 구간)에 열차 운행이 재개(再開)되었고, 6월 중순에는 고속도로 A 4의 Thüringer Zipfel 구간에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1990년 말까지 20여개의 도로 긴급조치가 완결되었다.

이외에도 교통 부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실시되었는데, 1990년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이 주어졌다:

- 독일 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DR) 망(網)의 선로 보수 조치
- 1990년 하계(夏季)부터 동서독을 통과하는 독일 연방 철도 (Deutsche Bundesbahn:DB) /동독 제국철도(DR) 열차량을 매일 200대 수준으로 증차
- 차선 확충, 정차 차도 확장등 과거 A 9 과 A 10 접속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량 작업
- 연방 국도에 대한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 작업
- 베를린으로 향해 있는 내륙 수로(水路)의 장애물 제거 작업
- 에어푸르트(Erfurt), 라이프찌히, 드레스덴 지역에 대한 새로운 항공 노선의 확충

교통부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기 위한 이 첫 조치들은 연방 정부에 의한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원에 의해 실현되었다. 연방 정부는 1990년 이 조치들의 시행을 위해 3차례에 걸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20억 마르크를 지원했다. 1990년중 이 재원은 이른바 “프로젝트 기금(Projektfond)”(여행 교환 자원)에서 약 10억 마르크 더 충당되었다.

1.3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발전

동독 지역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통일을 가속화하고 동독 지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경제 부흥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의 하나는 교통부문에 있어 효율적이고 환경보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경제와 주민들의 이동

수요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교통 흐름의 증가, 특히 동-서 방향으로의 교통량의 증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 정부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작업을 투자 정책과 공공 질서 정책을 조화롭게 진행해가는 가운데 환경 보호 차원의 요구와 더불어 전체 교통 구상에 통합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1.3.1 투자 정책

교통 부문의 투자 정책은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로 조정되었다. 연방 예산 중 교통 부문의 예산은 현재 최고의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폐 통합 이후 1992년 말까지 약 540억 마르크에 이르는 재원이 교통부문에 투자되었는데, 이중 약 50%가 동독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내역을 보면 철도 부문에 130억 마르크, 도로 부문에 55억 마르크, 내륙 수로 부문에 3억 마르크, 지방 자치 단체 교통부문 재원 조달법(GVFG)에 의한 공공 근거리 인력 수송과 지방 도로의 건설에 61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1993년중에는 131억 마르크가 투자된다(부록 Nr. 162 표 참조).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 우선은 200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교통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 특히 환경 보호 차원의 요구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계획 단계(특히 다양한 설계상의 연구, 환경유해성 검토)에서부터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의 보완 조치에까지 해당하는데, 보완조치의 예로는 특정 생물지역(Biotope)의 설정, 새로운 식수(植樹) 작업, 2차선의 분리를 통한 가로수 길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통일후 1년 9개월이 지난 1992년 7월 15일 연방 정부는 2010년까지 전 독일의 교통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위한 기초로서 연방 교통로 계획 1992(BVWP '92)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교통 재원 조달(CVFG)를 포함하여 연방 교통로 계획에 들어가는 총 투자 수요는 4,930억 마르크에

달하는데, 이중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는 총 투자의 1/3을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1993년 6월 30일 제 4차 간선로 확충 변경법과 연방 철도 확충법을 의결함으로써 법의 효력 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면서 계획에 소요될 투자 규모를 200억 마르크 더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동독 지역은 이 증축 투자액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서 축(軸)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BVWP '92를 예상하면서 1992년 4월 9일 의결된 17개 “독일 통일 프로젝트”는 - 여기에는 1990년의 “응급 조치 프로그램”의 계획들도 통합되었음 - 동서독 양지역의 주민들과 경제의 중심지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3개의 민간 회사들이 설립되어 독일 철도와 주정부의 위임을 받아 이 계획들을 실행하고 확충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로의 열악한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20년의 계획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 계획기간에 관한 법은 단지 제한적으로만 적절한 것임이 드러났다.

1991년 12월 19일 교통로 계획 촉진법과 1992년 12월 18일 간선도로 결정 규정이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동독 지역내 간선도로 확충과 서독 지역에 있는 간선 교통망의 접속점 확충을 위해 요구되는 계획 절차를 가능한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법규는 관할 관청의 병합, 여러 동일한 절차 단계의 통합, 행정 관청 처리 기간의 단축, 행정 법원 절차의 통합 등의 조치를 통해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된 기존의 기획 절차를 통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는 그 이후 여러 시행 절차 부문에서 우수한 조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환경적인 면에서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모든 계획 단계에 걸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

“독일 통일 교통로 프로젝트”의 몇몇 구간들은 그 프로젝트의 중요성 때문에 전통적인 허가 절차 - 그것이 촉진법에 의해 통폐합된 이후에도 - 가 적용될 수 없었는데, 이같은 부분들의 허가를 위해 입법자들은 투자조치법을 마련했다. 연방 의회는 1993년 6월 17일 하노버-베를린 구간 선로를 신속히 연결하면서 슈텐달(Stendal) 우회(迂廻) 노선을 의결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다음의 프로젝트들에 대한 또 다른 법안들이 논의중이다:

- 막데부르크-할레간의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쾨른-뢰베인 구간 (BAB 1 14)
- 해안 지역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 비스마르 우회(BAB A 20)

1.3.2 철도 교통

독일 통일과 더불어 독일의 철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조치들이 강화되었다. 특히 불비점(不備點) 해소를 위한 응급 조치, 기존의 선로망 확충, 신호 부문의 개선, 전철화(電鐵化) 조치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동서독간 인구 밀집 지역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었다.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동독의 철도망을 유럽 고속 철도망에 연결시키는 작업의 기반이 동시에 마련되었다.

1992년말까지 실시된 많은 조치들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 | |
|-----------------------|---------|
| - 650 킬로미터 전철화 | 9억 마르크 |
| - 2,220 킬로미터 침목 보수 | 19억 마르크 |
| - 5,500개의 전철기(轉轍機) 보수 | 6억 마르크 |
| - 기술 및 차량 부문 | 34억 마르크 |
| - 기타 보충 수요/보수 조치 | 62억 마르크 |

동독 철도망에서 서행 구간중 64%가 철거되었다(부록 Nr.163 그림 참조).

이같은 시설 부문의 조치들과 많은 수의 차량 투입, 확충을 통해 동독 지역도 EC/IC(Euro City:유럽 주요도시 통과 급행열차/Inter City: 독일 주요 도시 통과 급행열차) 및 IR(Inter Region:지역 연결 준급행 열차) 교통망에 편입되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고 명확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여행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보다 높은 쾌적감을 가져다 주었다.

독일 정부는 구서독이 국영 기업의 형태로 운영해 온 독일 연방철도(Deutsche Bundesbahn:DB)를 완전한 사기업 형태를 지닌, 구부채에서 자유로운 철도 주식회사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아래 이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과거 동독의 국영 철도인 독일 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는 초기에 이 위원회의 작업 대상이 되었다. 독일 정부는 1992년 7월 15일 원칙적으로 독일 연방 철도의 구조 개혁을 의결했으며, 1993년 2월 17일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안들을 인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로써 독일 경제에 있어 가장 규모가 큰 기업 재정비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1.3.3 연방 장거리 도로

연방 장거리 도로(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 차원의 幹線 道路) 건설을 위한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다:

- 가장 심한 사고 지역 및 사고 원인의 제거
- “응급 조치”를 통해 교통 장애의 제거 또는 완화
- 간선 도로에 위치한 교량들의 보수,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 및 즉각적인 조치들

1992년 말까지 시행된 여러 조치들 중 중요한 항목으로는 다음이 있다:

- 5,600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 보수 33억 마르크
(이 중: 12개 지역 우회로 건설)
- 110 킬로미터 신축, 확충 11억 마르크
- 770개에 이르는 교량 재정비 및 신축 5억 마르크
(이 중 20개는 대형 교량)
- 안전시설물 설치, 기타 보충 수요/보수 6억 마르크
(이에 대해서는 부록 Nr. 164-165 표/그림을 참조할 것)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기술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동독 전지역의 고속도로망에 보호벽 형태의 중간 분리대를 확충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사고 지역에는 신호 시설을 설치했고, 접속 구간의 제반 시설들을 개선했으며, 전체 도로망에 걸쳐 표지판 작업과 차선 표지를 근본적으로 새로 작업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992년 말까지 약 600 킬로미터의 고속도로에 걸쳐 중앙분리대에 위치한 비상 전화기를 양 가장자리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비상 전화기를 갖추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고속도로에는 새로 비상 전화기를 설치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단기적으로 계획한 재정비 또는 보존 프로그램의 70%가 이미 완결되었거나 완료 직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장기적인 프로젝트들(신축 및 횡단면 확장), 특히 “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행정적·기술적 계획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금번에 의결된 연방 장거리 도로 수요 계획에 의해 2012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235억 마르크에 이르는데, 2000년까지 190억 마르크가 투자되어야 한다(5개년 계획).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00년경에는 중요한 노선들과 경제 중심지들이 확충이 될 것이며, 관심있는 관광 지역들에 이르는 교통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3.4 수운 교통 및 연방 수로

1991년부터 시행된 조치들은 필요한 수로(水路)의 확충을 위한 예비 작업 외에도 수문(水門)과 축대(築臺)의 시급한 보존 작업 및 신축 작업, 수위(水位) 측정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연안 보호의 조치들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필요한 수로의 확충작업과 관련해 BVWP '92의 계획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 하노버-베를린간 동(東)-서(西) 수로 확충("독일 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일부)
- 수로 건설을 통해 엘베(Elbe)강 수운 교통의 개선
- 잘레(Saale)강(엘베강의 支流임) 수로 확충 작업
- 하벨-오데르 강 수로의 일부 확충
- 로스톡(Rostock), 비스마르(Wismar), 볼가스트(Wolgast) 항구들의 해양 방향의 선박 진입 시설 개선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계획 작업이 시작되었고, 1단계의 계획 절차가 완결되었다.

과도한 시설용량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구동독의 국내 선박업체들은 통일 당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경기 상황을 감안해 재정비 작업을 실시한 결과 국내 중소조선 컨소시움에 이 업체들을 매각하는 작업이 용이해졌다.

1.3.5 공공 여객 교통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도로 건설

공공 근거리 여객교통(ÖPNV)은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의 정치적인 책임에 속하는 영역이다. 연방 정부는 지방 자치 단체 교통 자원 조달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 도로 및 공공 근거리 여객 교통의 상황 개선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1992년 조세개정법에 의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을 축적하고, 지원율을 인상하며, 지원 목록을 확대한 것은 동독 주들과 베를린의 특별한 조건들을 고려한 것이다.

동시에 프로그램의 시행 권한들이 주정부에 대폭 이관되어, 주정부가 재원의 80%를 - 각 주의 교통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 융통성있게 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방 정부는 나머지 20%에 대해 프로그램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근거리 교통 선로 계획들이 이에 해당한다.

1992년 말까지 이를 위해 61억 마르크의 연방 재원이 제공되었는데, 그중 중요한 지원 대상 부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베를린 전철(S-Bahn) 구간의 응급 조치 및 복구 작업
- 10개 도시의 전철 신축 공사 및 확충 공사
- 전철 및 버스 운행장의 현대화
- 노선 버스의 신설
- Tetra-전철의 현대화
- 시내 주요 도로의 확충
- 초지역적인 교통망을 위해 교통면에서 중요한 진입용 지선(支線) 도

로의 확충

지방 도로 건설이라는 차원에서 1991년에만 2,800여개의 개별 조치들이 11억 마르크의 연방 재정 지원을 통해 시행되었다. 1992년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약 20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1991년, 1992년중 “동독 부흥”이라는 공동 대응책의 재원에 의해 조달된 고수준의 재정 지원을 1993년, 1994년중에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 교통 재원 조달법(GVFG)내의 재원 분배 상황을 변경함으로써 매년 총 3억 9,500만 마르크의 재원이 추가로 서독에는 불리하고 동독에는 유리하게 동독 지역에 제공되었다.

과거 국가가 운영해 온 공공 근거리 여객 교통(ÖPNV)은 통일과 더불어 재조직화되어야 했는데, 이 작업은 현재 상호 연관성을 지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 신탁청을 통해 근거리 운수업체들을 재산법상으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양해가 있을 경우 민간 교통업체에 이관하는 작업
- 노선 허가의 재분배 및 교통부문 협력의 형성
- 근거리 여객 교통의 경제성, 기술적인 장비 및 서비스의 개선

1990년부터 생겨난 142개의 운수업체중 111개 업체가 근거리 여객 교통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들중 90개 업체의 경우에는 신탁청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로의 재이전 작업이 실시되기 이전에 근거리 교통 부문을 업체의 다른 부문과 분리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현재 189개 광역 단체들과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은 26개 자치시예로의 이전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정치적, 기업적 책임의 공동 수행이라는 면에서 노선 허가를 분배하는 작

업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경쟁업체들이 광역 단체 해당관청에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차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기업들외에도 민간 운수업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교통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연방 교통성은 지역 회의의 개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자문 제공, 신탁청 근거리 여객 교통(ÖPNV)-자문위, 해결하기 어려운 재조직상의 개별 문제들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재조직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3.6 항공 교통

독일 통일과 더불어 독일 항공 영역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되찾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항공 교통은 역동적인 발전을 맞게 되었다.

1992년중 390만의 승객들이 동독 지역 4대 공항인 베를린-쉴레펠트, 라이프찌히/할레, 드레스덴, 에어푸르트 공항을 이용했다. 지난해만 해도 동서독 간 여객 운송은 50% 증가를 보였다. 국경 통과와 항공 교통은 과거 낮은 수준에 있었으므로 더욱 높은 증가를 보였다. 휴가 전세 교통은 일년 사이 무려 두배로 증가했다.

이같은 교통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심한 정도로 노후한 구동독 안전 기술을 현대적인 레이더 시스템, 레이더 데이터 기술(記述) 시스템, 기계식 이착륙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항공 노선과 그에 필요한 관제 시스템의 설치를 위해 기존 시설들의 현대화 작업이 실시되었고, 아울러 새로운 시설물도 가동되었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4대 공항에 대한 건축 활동은 현재 항공 운수 면적의 보완, 운영 장비의 현대화, 이착륙 활주로 보수 작업, 통관 터미날의 확충·신축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7억 1,000만 마르크 규모의 투자가 실시되었다.

국내 항공 회사의 병합과 관련하여 베를린-쉴레펠트, 라이프찌히/할레, 드레스덴, 에어푸르트 공항과 같은 국제 공항들은 해당 광역 자치 단체들의 참여하에 민간경제적인 조직을 갖춘 공항 운영 회사들로 이관되었다. 베를린-쉴레펠트 공항에는 연방 정부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항 지주(支柱)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는 이 지주회사 지분의 26%를 갖고 있다.

1.3.7 해상 교통

1990년 하반기 이래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3대 항구인 로스톡, 비스마르, 슈트랄준트 항구의 화물 선적(Transshipping) 작업은 국가의 운송 통제가 무너지고 특히 구 코메콘 국가들과의 경제 거래가 줄어들면서 50%나 줄어들었다.

1991년 중반 이 항구들은 신탁청에 의해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로스톡과 비스마르 항구의 경우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정부가 74.9% 참여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구소련군 서부 그룹의 철수 수송의 40%를 수행한 페리(ferry)항인 무크란(Mukran)항은 1993년 4월 1일자로 자스니츠(Saßnitz) 지방 자치 단체로 이관되었다. 오스트제(Ostsee: 東海) 페리 선박업체들의 한 이익 단체가 현재 이 항구의 운영권 인수 문제를 검토중이다.

많은 평가보고서들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항구들을 포함한 오스트제(동해)를 통과하는 화물 수송 및 승객 수송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범위한 구조 조정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내륙과의 연결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항구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원래 161척의 화물선과 약 1만 3,000명의 종업원을 지닌 독일 로스톡 선박회사의 민영화가 1993년 중반에 완료되었다. 연방 정부는 이 선박회사가 1991년, 1992년 시장경제로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어려운 국면을 맞았을 때 매년 2,500만 마르크를 구조 조정 지원금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미 기업 재정비 작업이 진행되어 선박수를 63척으로 줄이고, 종업원 수는 9천명이나 감축시켰지만 이 회사는 경영면에서 지속적인 구조 조정 조치들이 불가피한 상태에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경우 선박 회사들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로스톡이라는 입지를 보존해야 할 것이다.

1.3.8 도로 교통 및 도로 교통 안전

수십년간 여행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자동차의 구입을 제한해 온 동독 지역에서의 기동성 정도가 현재는 점점 서독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

도로 교통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교통 부문은 동독 지역에서도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의 주범의 하나로 계속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적인 자동차의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993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된 490만대의 오토(Otto)형 연소 자동차중 45% 정도가 법규가 정한 촉매 전환기를 부착했다. 납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휘발유가 전체 휘발유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월 기준 약 89%에 이르렀다.

기동성의 증가와 더불어 1991년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사고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는 1990년에 비해 19% 늘어났고(3,733명), 부상자수는 33% 증가를 보였다(83,580명). 1992년에는 자동차 사망자 수가 1987년 이래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1992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는 3,341명으로 이는 1991년에 비해 11% 줄어든 수치이다. 그러나 부상자 수는 90,305명으로 재차 8% 증가를 보였다. 사망자 수

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동독은 인구 100만명당 210명의 사망자수를 기록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은 서독 지역에 비해 두배나 높은 편이다(서독지역은 100만명당 114명).

이미 1989년부터 교통 교육 및 계몽 조치를 위한 기존의 재정은 동독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수 재원에 의해 늘어났다(1991년: 3,400만 마르크, 1992년:3,610만 마르크, 1993년:3,530만 마르크).

연방 교통성은 이를 통해 구동독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 사업의 재조직화를 지원하고, 독일 교통안전위원회(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t)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대상 그룹에 적절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예를 들면 “Rücksicht kommt an”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의 교통 계몽 캠페인). 이같은 조치들은 동독 지역의 대형 교통 사고를 줄어들게 하는데 기여했다.

동독 지역에서 심각한 정도의 사고 추세, 도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의 부족, 경험적인 연구의 부족을 고려하여 연방 도로청(BAST)의 1991/92년 도로 교통 안전 연구 프로그램에서도 연구 재원의 50%와 안전 연구를 담당하는 인력의 20%를 동독 지역의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구조 활동 부문에서도 새로운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동독 주들은 독자적인 도로 구조 서비스망을 구축했다. 지역적인 투입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민간 보호용, 국방용, ADAC-공중구조용, 독일 구조비행감시협회용, 국제 항공 앰블런스용 헬기 착륙장들이 운용되고 있다.

1.3.9 도로 교통 관련 업체

구 인민소유의 교통 부문 콤비나트들을 민영화하는 작업은 특히 중소기업 형태의 교통 기업을 형성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 국영 교통기업들이 해체되었다. 즉 근거리 여객 교통(ÖPNV)(위 1.3.5 참조)이 해체되었고, 그 다음으로서는 잔여 기업단위들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실시되었다.

1993년 8월 말 신탁청 교통 부문 담당부서는 745개의 업체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는 활동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 화물 교통 기업들은 계약에서 18,700개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20억 마르크의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동의했다. 근거리 여객 교통(ÖPNV)(24,820개의 일자리)과 항구 및 공항(7,500개의 일자리)을 포함하여 교통 부문에서는 총 5만 1,000개의 일자리가 계약상 보장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민영화된 기업의 절반은 동독 기업들이 매입했거나 동서독 기업들이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점이다.

도로화물 운송업체들은 그 사이 점점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독 지역에는 운송 능력은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실제 운송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그동안 투자 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점점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외에도 다른 부정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중동부 유럽지역 기업들의 동독 시장 진출 및 합병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동독 지역 화물 운송 업체들의 경제적인 장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불안은 충분히 근거있는 것이다.

경제연구소들이 발표한 잠정 수치에 따르면 동독 지역 원거리 도로 화물 운송은 1992년중 약 5,500만톤을 기록, 93%의 성장을 보였다. 철도 운송이 계속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전체 원거리 화물 운송에서 화물자동차에 의한 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7%에서 1991년에는 20%, 그리고 1992년에는 37%를 차지했다(1993년 5월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IW) 자료).

동독 차량의 화물시장 점유율은 1991년 47%에서 1992년에는 55%로 늘어났다. 동서독간 원거리 도로 화물 운송에서 동독 화물차에 의한 운송은 서독⇒동독 방향의 운송이 38%(91년:31%), 동독⇒서독 방향의 운송이

54%(91년:43%)를 차지했다(뮌헨 소재 ifo-경제연구소의 1993년 2월 보고서). 부록 Nr. 166 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운송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요구된다:

- 과도한 운송 능력의 폐지 및 시장의 정비
- 비용압박을 덜어줄 수 있는 단기적 해결 방안 모색
- 독일 화물교통법규의 관점에서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의 정보문제의 해결

이외에도 동 부문의 기업들이 협력의 기회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연방 교통성은 향후에도 동독 교통기업들과 대화를 강화하는 등 도로 운송 부문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1.3.10 위험물 운송

동독 지역의 위험물 운송 부문을 서독의 법규에 맞게 전환하는 작업은 별다른 어려움없이 진행되었다. 전환 시점은 원칙적으로 1991년 7월 1일이었으나, 저장 탱크나 차량의 제작 및 설비에 관한 법규의 전환 시점은 1992년 7월 1일이었다.

연방 교통성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해 전환 작업을 적극 지원했다:

- 해당 관청, 교통 종사자, 운송업자들을 대상 그룹으로 한 설명회의 개최 및 참여
- 위험물 운송에 관한 새로운 법규의 핵심 내용을 소책자로 발간, 배포

1.3.11 교통 분야의 연구

동독 지역의 교통 부문 시설들을 전환하는 작업은 일련의 연구소들을 생겨나게 했으며, 이 연구소들은 또한 동독 지역의 연구 풍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풍요하게 해주었다. 현재 교통 부문의 연구에 종사하는 기업은 45개에 이르고 있다. 이 기업들의 경제적인 형편은 다양하지만 시장 상황에 적응한 상태이다.

연방 교통성 장관은 연방 정부 및 주정부의 교통 행정 기관들에게 동독의 교통부문 연구소들이 어떤 기업적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었다. 연방 교통성 장관은 교통 부문 연구 시설들이 그 잠재력을 시장경제의 요구들에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부터 이들과 접촉을 갖고 교통 부문 연구에 이 시설들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2. 우편 및 통신

2.1 통신

2.1.1 1980/90년 당시의 상황

과거 동독에서는 공공 통신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문제를 독일우편(Deutsche Post:DP)이 담당했다. 산업계와 행정 부문 (예를 들면 군사부문, 국가 안보 부문)은 일부 특별 통신망을 설치하여 운용했으며, 이 통신망중 몇몇은 공공 통신망에도 연결되어 있었다.

중앙 계획경제의 통합적인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로서 독일우편(DP)은 정치적인 우선권과 경제 체제의 메카니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으며, 투자나 요금은 물론 수익금의 사용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통신기술산업 제품들의 투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기술산업 제품들은 대부분 수출되거나 특별 통신망 운영자들에게만 제공되었다.

공공 통신부문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수준이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독은 주민들에게 좋은 기능을 가진 통신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서독 양 지역은 전화망이나 통신 서비스에 있어 완전히 상이한 발전을 보였다. 구동독 공공 통신망의 규모와 구조는 경제계와 사회의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전을 보였다.

서독에서는 독일 연방 체신 텔레콤(TELEKOM)이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적인 발전 추세에 항상 적응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동독에서는 그같은 기술 혁신이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서독의 텔레콤이 조사한 동독 전화망의 상태는 다음과 같았다:

- 동독의 전화선 보급도는 100가구당 11회선 또는 100인당 7회선이었음(비교: 서독은 100가구당 92회선 또는 100인당 42회선).
- 동독의 전화 보급 대수는 총 180만대, 서독의 총 보급수는 2,900만대
- 동독 지역에서는 통신서비스의 미비로 상이한 전화선이 병존했었음. (단회선, 2인 회선, 4인 회선, 10인 회선, 시간별 회선등). 시간별 회선이란 예를 들면 17시-6시 시간대에만 기능이 좋은 회선이었음. 이 회선은 다른 시간대에는 단지 오는 전화만 연결되거나 완전히 다른 회사나 관청들에 의해 사용되었음.
- 동독에서는 비데오 텍스트는 전혀 부재했고, 아주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 전송 서비스가 있었을 뿐이며, 공공 이통통신도 전혀 없었음.
- 지역 전화망의 사용시간 단위계산을 위한 기술적인 시설물들이 부재했음.

- 장거리 전화망의 시간 단위가 서독과 달랐음.
- 전화망의 전송 능력은 기술의 노후화로 아주 열악한 상태였음.
- 전화 신청후 대기 기간은 20년이나 걸렸음.
- 수동식 전화 연결시 대기 시간은 10시간이나 소요되었음.
- 전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 시설들이 상당한 정도로 마모되어 있었음.
- 지역 연결 기술의 70%는 25년-60년 정도로 낡은 것들이었고, 23%는 무려 70년이나 된 노후한 것이었음.

동독 지역 통신망이 지닌 이같은 기술상·조직상의 결함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동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텔레콤(TELEKOM)에게 하나의 거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황폐한 수준의 동독 통신망으로 인한 출발 당시의 여건은 통일 이후에 현대적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1.2 1990년 이후 통신망의 확충

동독의 대변혁 직후 양 독일의 체신 장관들은 당장 통신 부문에 관한 논의를 가졌고, 그 결과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설주들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구상인 “Telekom 2000”이라는 확충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몇년 내에 독일 연방 체신 텔레콤은 “Telekom 200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통신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하나를 건설할 것이다. 이는 동독 지역의 경제 발전과 물질적 측면에서의 독일 통일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를 마련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Telekom 2000”은 1997년까지 동독 지역의 통신 수준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이다. 1997년까지 구체적인 공급 목표로 다음과 같은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 570만 회선의 전화선 (1989년 :180만 회선)
- 7만 개의 동전 및 카드 공중전화기 (1989년 : 2만 2,000회선)
- 40만대의 팩스 회선 (1989년 : 2,500 회선)
- 50만대의 이동 전화 회선 (1989년 : 전혀 없음)
- 9만 회선의 데이터 통신 (1989년 : 500회선 이하의 수동식 회선)
- 500만 케이블 TV 회선 (1989년 : 전혀 없음)

이외에도 특별히 높은 수준의 기술적 장비들과 구조 기술을 요하는 약 2,000여개의 건물에 대해 신축 작업 내지는 전반적인 정비 작업이 있게 된다. 확충 프로그램에 소요될 재원 규모는 600억 마르크이다.

이외에도 동독 지역 통신 부문 모든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 재훈련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연방 체신 텔레콤의 협력 프로그램들은 근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서독 지역 텔레콤 소속 3,000명의 동료들이 동독 지역 동료들 옆에서 일하고 있다.

동독 지역에서의 통신 수요의 급성장은 통신 부문의 확충을 위한 독일 연방 체신 TELEKOM과 독일 통신 업체들의 집중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체에 대한 발주에 있어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다. “Turn-key” 프로그램 (역주: 최종 사용자에게 연결되는 전화가입선로 (지역망 - 사용자)를 신속히 구축하는 사업)에 따라 TELEKOM의 위임을 받은 일반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전체 통신 기술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계획에서부터 선로 건설, 기술적인 설비 및 고객의 전화 접속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이 “Turn-key” 프로그램은 1992년에 이어 1993년에도 약 20만 회선에 이르는 전화선 가설을 속행하고 있다.

“Telekom 2000”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독일 연방 체신 TELEKOM은 동독 지역 최대의 단독 투자자로 부상했다. 1992년에만 해도 동독 지역 기업들에게 약 40억 마르크에 이르는 수주가 배당되었다. 이로써 동독 지역에서는

동 기업에서 제공되는 4만 3,000여개의 일자리 외에도 수주 기업들에서 제공되는 5만개의 일리가 현재 확보되어 있다(부록 Nr. 167 그림 참조).

TELEKOM에 의한 통신 부문 인프라스트러처의 확충 작업은 이동 통신 및 위성 통신 부문의 민간 기업들에 의해 보완되고 촉진되었다. 이는 1989년 제 1차 체신 개혁(Postreform I)을 통해 이동 통신 및 위성 통신 시장에 경쟁을 허용한 이후 가능해졌다.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동독 지역의 통신 부문의 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다.

2.1.2.1 디지털 오버레이 망(overlay net)

전화 회선의 부족 외에도 접속 능력과 같은 통신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미 1991년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통신망에 초현대적인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1992년에도 이의 확충 작업이 수행되었다. 디지털 오버레이(Overlay)망이라고 불리는 이 통신망은 아날로그 통신망과 중첩적으로 설치되었고, 전화 교류를 디지털 통신망으로 옮김으로써 아날로그 통신망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1991년에는 1,500 킬로미터, 1992년에는 2,000킬로미터의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되었으며, 모든 장거리 중개소의 70%가 디지털화되었다. 1993년에는 전지역을 커버하는 통신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142개에 이르는 모든 중개소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층적인 통신망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낡은 통신망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며, 몇년 내에 동독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통신망을 갖춘 지역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2.1.2.2 독일 전화망의 단일화

이와 더불어 동베를린과 동독 지역을 단일한 독일 전화망에 편입시키는

작업이 전 독일 지역에 걸쳐 시작했다.

베를린에서는 이미 1992년 7월 27일 시내간 통화시 과거에 있었던 국번이 사라짐으로써 “통신 장벽”의 마지막 잔재물들이 제거되었다. 이를 위해 15만 회선의 전화선에 대한 전환 작업이 실시되어야 했다. 1992년 8월 31일-9월 1일 밤사이 베를린 지역 전화 통합 작업은 완료되었다. 동서 베를린의 전화선들은 독일의 단일한 국번과 요금 지역에 따라 조정되었다. 다수의 가입자-호출 번호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경되었다.

로스투크과 라이프찌히에서는 1992년 8월 1일자로 동독 지역내 지역 번호 전환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미 1992년 9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서는 단일한 전화 요금 체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동독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의 80% 이상이 전화 부문에서의 통일을 체험했다. 이 계획은 1993년중 거의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

2.1.2.3 전화 가설 및 데이터 통신

통일 이후 동독과 동베를린 지역에서는 약 160만 회선의 새로운 전화선이 가설되었다(부록 Nr. 168 그림 참조). 이로써 총 전화 회선 보유고는 300만대를 넘어섰다.

통일 이후 1993년까지 독일 TELEKOM이 동독 지역에 가설한 전화 회선수는 1881년 베를린에서 첫 전화 가설이 있는 이후부터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하기까지 놓았던 전화 가설수에 맞먹는 것이었다.

많은 부문에 있어 이미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루어졌다. 1993년부터는 미해결된 전화 신청건 수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즉 새로운 신청자보다 더 많은 전화 가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독 경제의 부흥을 일관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독일 TELEKOM은 1992

년에도 기업체의 고객들에게는 전화 가설상 우선권을 부여했다. 신설 전화의 1/3은 기업체들에게 제공되었다. 경제 부문의 기업들 외에도 특히 행정 부문, 병원, 대학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화 공급이 이루어졌다. 특히 시골 지역의 소형 업체들에 대한 전화 공급은 아직도 문제들이 있다.

아직까지 정상적인 전화 가설을 받지 못한 기업체의 고객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C-네트, D1 또는 D2-네트 (역주: 이들은 이동통신망임)에 가입할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독일 TELEKOM은 게다가 1만개의 이동 전화기, 그리고 또 다른 이동 통신 사업자인 만네스만(Mannesmann)사와 마찬가지로 이동 전화를 위한 등록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TELEKOM은 동독 지역에 현대적인 통신 부문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면서 종종 이전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일련의 특별 조치들 외에도 DAL (무선 연결)이라는 것이 있다. DAL은 충분한 증개능력이 있으나 정상적인 케이블 전화 접속이 없는 지역의 기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1992년말 이미 3만 4,000의 DAL 전화 회선이 생겨났으며, 이 기술을 이용한 전화선을 약 5만 회선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케이블 연결의 일반적인 전화망 확충 작업의 진척과 더불어 무선 연결 기술은 철거되어 다른 필요 지역에 다시 투입될 것이다.

동독 지역에는 데이터 통신망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TELEKOM은 1991년에 6,000회선, 1992년에는 1만 7,000회선 이상의 데이터 통신 회선을 새로 설치했다.

2.1.2.4 공중 전화

TELEKOM은 특히 전화망이 아직 그 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로 확충되어 있지 못한 지역에 대해 공중 전화를 대대적으로 가설했다.

1991년중 4,900 회선, 그리고 1992년중 8,735 회선의 새로운 동전 사용 전

하기 또는 카드 전화기가 설치되었다. 이중 카드 전화기는 50%를 차지한다.

1992년에만 해도 1만 4,867개의 구형의 동전 사용 전화기를 현대화, 교체하는 작업이 실시되어 장거리 통화가 가능해지거나 또는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6,197대의 공중 전화기는 파손이 심해 완전히 신형으로 대체되었다.

1992년 말 이래 동독 지역에는 4만 9,000여개의 공중 전화가 가설되어 있는데, 이중 2만 9,000대는 동전 사용 전화기, 6,000여대는 카드 전화기, 1만 4,000여대는 우체국이나 개인 전화 시설에 가설되어 사용되었다.

2.1.2.5 이동 통신

C-네트 이동 통신은 통일 이후 무엇보다 전화 공급상의 부족 현상들을 제거하는데 기여했으며, 따라서 이미 초기부터 경제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경제 중심지, 인구 밀집지역들을 중심으로 확충되었다. C-네트의 확충작업은 1992년에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통신 질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D-통신망은 전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통신이 가능한 이동 통신망이다. 연방 고속도로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충 작업이 이루어져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1993년에는 거의 전역을 커버하게 될 것이다.

동독 지역에 현대적인 이동 통신망을 확충하는 작업은 독일 전역에 또 다른 디지털 방식의 이동 통신망을 운영할 민간 기업들의 컨소시엄에 E1-라이센스를 내어줌으로써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특히 동독 지역에 신속한 공급망을 확충하는데 역점이 주어졌다.

2.1.2.6 라디오/TV 송신망

동독 지역은 신속하게 그리고 전역에 걸쳐 공영 방송의 TV 프로그램 공급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역에 기본 송신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이미 1992년중 송신 상태를 현저하게 개선하기 위해 6개 지점에 중계소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공급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민간 방송 업자들은 현재 대도시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0개의 지역 송신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 부문에서도 TELEKOM은 새로운 공급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라디오 방송 시스템을 분권화시키기 위해 4-5개의 UKW-망이 생겨났으며, 현재 Deutschlandfunk와 RIAS가 제공하는 UKW-망을 포함하는 전독일 송신망 구축을 계획중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에 의한 라디오 프로그램 및 TV 프로그램의 공급도 상당한 진척을 거둘 수 있었다. TELEKOM은 동독 지역에 약 100만 가정의 케이블을 가설했으며, 이 중 이미 절반 정도가 이용되고 있다.

2.1.3 1993년도 확충 목표

동독 지역에서는 모든 통신망의 확충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광역 대통신망은 100만여개의 접속 가능성을 추가로 갖추고 있다. 공공 부문의 전화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약 1만 3,000대의 공중 전화를 새로 확충하거나 현대화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TELEKOM과 만네스만 이동 통신이 운영하는 D-이동 통신망을 거의 독일 전역에 걸쳐 확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중에는 또한 동독 지역의 22만 가구에 대해 광역 대서비스를 위한 광학적인 연결 방식인 광섬유 가설이 이루어진다.

1993년에는 85만대의 전화 가설과 3만 1,800대의 데이터 회선의 가설 작업이 실시된다. 향후에도 동독 지역의 경제 부흥을 철저히 지원하기 위하여 전화 가설의 경우 기업체의 고객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다. 이로써 산업체 및 일반 경제 부문 종사업체들의 통신 요구가 대대적으로 충족될 것이다.

전화망 확충 작업도 또한 강화될 것이다. 1993년에는 모든 중앙전화국 및 자동전화국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한 다층화 작업이 실시된다. 기타 500여개의 지역 전화국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도 이루어진다. TELEKOM은 이같은 작업들을 통해 동독 지역에 ISDN 도입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같은 조치들은 현대적인 기술의 사용으로 통신서비스의 질도 현저히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1993년중 국번 전환 작업이 완료되면 전 독일지역에서 전화 걸기가 훨씬 용이해 질 것이다.

2.2 독일 연방 우편(Postdienst)

2.2.1 1989/90년 당시의 상황

1990년 10월 3일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국영기업인 독일우편(DP)의 우편 부문이 독일 연방 체신 기업인 연방 우편(POSTDIENST)에 편입되었다. 당시 동독 우편부문 종사자수는 8만 8,000명, 영업소의 수는 8,500개였다.

이미 1989년 12월 동서독 체신 장관들간에 첫 합의가 있으면서부터 양 지역 우편 분야의 상호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필요한 조직상의 우편 연합(Postunion)을 형성하는 작업에서 시작되어 나중에는 양 지역의 우편행정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작업은 시기적으로 독일 연방 체신기업인 POSTDIENST가 변혁을 맞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되었

다. 즉 우편 및 통신 부문에 있어 새로운 구조 조정이 있는 후 우편 부문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해야 하였다.

그 다음으로 구 동독의 독일우편과 합병을 해야하는 역사적인 도전을 맞게 되자 독일 연방 우편은 거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단순히 6,200만명의 인구를 지닌 서독 지역과 1,600만명의 인구를 지닌 동독 지역의 우편 서비스 공급을 합치는 작업 외에도 상이한 두 조직 형태를 통합하는 작업이 있어야 했다. 분명 이는 경제역사상 최대의 합병중의 하나였다.

동독 지역의 건물들과 기술적인 장비들은 대부분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었으며, 대규모의 정비를 필요로 했다. 업무 영역중 다수는 체신 서비스와는 상관없는 것이었고, 정작 핵심 분야인 우편물 및 소포 업무는 서비스의 종류나 기존의 수용용량 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했을 뿐 아니라 또한 구동독에서의 지배적인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유로운 시장 경제 및 민주적인 사회 질서에 걸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화폐통합 이후부터 배달량이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급증한 수요를 맞은 서독의 통신 판매에 의한 우편물 발송이 이같은 교류량의 증가의 한 요인이었다.

이미 1990년 10월 동독 지역의 우체국들이 매일 처리해야 할 소포량은 35만개로 늘어났다. 1991년 10월에는 마침내 최고 일일 처리량이 거의 100만건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2년도 못되는 기간 사이에 배달 물량이 10배나 증가한 것을 의미했다. 당초의 여건이 아주 열악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여러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수요에 걸맞게 처리 능력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작업 외에도 크기와 무게, 발송 종류, 예를 들면 수취인 대금 지급과 같은 발송 형태 면에서 우편 상품의 크기를 서독에서 이미 독일 연방 체신 기업인 POSTDIENST가 제공하는 형태로 과감히 조정하는 작업, 그리고 전지역에 걸친 하우스 배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POSTDIENST는 즉시로 이같은 하우스 배달 확충 작업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다. 기존의

건물들이 그 형태와 건축 상태면에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업무의 능력을 확대하고 적정화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 단기간에 걸친 신축 작업은 어려운 토지 상황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공간적인 상황이 원하는 정도로 교정이 불가능해 기술적인 보조 수단들을 투입하는 일도 모든 경우에 원하는 수준만큼 되지 못했다.

편지 및 소포 서비스에 너무 많은 시간의 소요, 처리 장소에서의 역류로 인한 정체 현상 등은 결국 체신 기업의 효율성을 전체적으로 비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같은 비난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으며, 실질적인 상황,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특히 작업장의 종사원들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POSTDIENST는 이같이 늘어난 배달 물량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완전한 우편 상품의 종류들을 갖추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발휘했다. 이 모든 것은 우편 부문 종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행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2.2.2 1990년 이후의 발전

통일 후 일년 동안 POSTDIENST가 극복해 내어야 할 재정비 과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명확해졌다. 과거 동독의 체신기업인 독일우편(DP)은 그 효율성에 있어 서독 기업보다 30년 내지 40년은 뒤떨어져 있었다. 전 독일 지역에 걸쳐 단일한 우편 제도를 마련하려면, 경영·조직·재정·인력·투자 정책면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취해져야 했다. 그러나 구조 조정과 현대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같은 도전들은 여전히 완전히 극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들 중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근본적으로 새로운 조직 확충 작업과 인력 부문의 조정 작업을 통해 비용상의 적자 상황을 극복

- 1991년부터 동독 지역에 편지 및 소포 서비스 부문에서 완전한 우편 상품의 제공
- 편지의 경우 1,600만명의 동독 주민들을 위한 전지역적인 가정 우편함 배달 제도의 도입 작업이 시작되었고, 전지역적인 소포 배달 작업도 시작됨.
- 편지 및 소포물의 경우 운영상의 물류(物流) 구상이 동독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현됨.
- 드레스덴과 라이프찌히 지역을 야간 항공 우편망에 연결시킴으로써 배달 기간이 결정적으로 단축됨.
- 전독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다섯 자리 우편번호 제도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동독, 서독의 지역을 의미하는 "O", "W" 문자표시를 제거함. 지금까지 소모적이었던 배달 시스템이 대폭 단순화됨.

POSTDIENST는 이 조치들의 시행과 더불어 1993년 말까지 동독 지역에 약 14억 마르크를 투자할 예정이며, 1995년까지 투자액은 30억 마르크로 늘어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편지 및 소포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구상들이 결정적인 진척을 볼 것이다. 앞으로 몇년 내에 17개 편지 우편 센타와 8개 소포 우편 센타가 생겨날 것이다.

POSTDIENST는 이로써 동독 지역에 있어 일자리 확보와 중소기업의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동독 지역의 건설 부문은 건물 신축, 확장, 개조의 수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운송 기술 및 배달 기술을 통해서도 일자리가 보존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

POSTDIENST는 1991년중 동독 지역에서 아직 미해결된 구조상 결함들로 인해 22억 마르크의 수익에 32억 마르크의 지출(배달 포함)을 기록함으로써 10억 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했다. 21억 마르크에 이르는 임금코스트는

인력 감축과 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7억 마르크의 매출액을 초과했다. POSTDIENST는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는 상당한 매출액 증가와 투자를 통해 동독 지역에서 흑자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 POSTDIENST는 동독 지역에서도 서독 지역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같은 수준의 서비스란 예를 들면 편지 전송 기간이나 소포 배달 기간의 단축 등을 의미한다.

이로써 POSTDIENST는 동독 지역에서 관청 형태의 조직에서 현대적이고 경제적인 기업 조직으로의 근본적인 전략적 재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상의 작업 질서나 업무 영역들은 앞으로 여러 다른 국제적인 체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편지, 소포, 창구 업무등 3가지 분야로 구분될 것이다.

2.2.3 상품 및 서비스

현재 독일의 우편 분야에서는 시장 지위와 수익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구조 및 비용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가능성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서만 주민들, 기업들 그리고 행정 부문에 효율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체신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부록 Nr. 169 그림 참조).

핵심 사업을 전략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은 향후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 새로운 소포 우편 구상은 POSTDIENST를 민간 경쟁자들보다 더 우수한 기업으로 만드는 새로운 특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구상은 민간 또는 기업의 고객들에게 많은 새로운 장점들을 가져다 준다. 1995년까지 완결될 예정인 이 새로운 소포 구상의 실현을 위해 쾰리 카우(Zwickau), 노이브란덴부르크, 베를린 북부, 베를린 남부, 드레스

덴, 에어푸르트, 막데부르크에 소포 우편 센터가 설립된다.

- 5자리 수의 새로운 우편번호 도입과 연관된 새로운 편지 구상이 실현되면 POSTDIENST는 뚜렷하게 질적인 향상을 이룩함은 물론이고 수십억 마르크에 이르는 기업합리화의 가능성을 얻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동독 지역에서의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우편 상품이 뚜렷하게 제시되고, 작업 질서가 조직적인 견실함을 얻게 되며, 가격 체제가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동독 지역에서의 배달 업무의 능률이 급속히 서독 수준에 이를 것이다.

3. 현대적인 환경보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

통일 당시 구동독의 공공 부문 인프라스트럭처는 거의 대부분이 결함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중간 크기의 도시들도 인프라스트럭처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수도망, 정수 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확충 작업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미 시설물이 있는 곳에도 계획과 허가라는 시간을 요하는 선행 작업을 포함하여 인프라스트럭처를 새롭게 확충하는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성능이 우수한 정수 시설, 현대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은 오늘날 지방 자치 단위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중의 하나이다. 폐기물 처리 부문에 있어 완벽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작업은 산업 입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결정을 유인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환경 부문에 있어 신속한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은 환경정책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정책적인 이유에서 동독 지역의 긍정적인 경제 발전

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동독 지역에 효율적인 환경 보호 부문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1990년 7월 1일 - 1992년 12월 31일 기간중 총 12억 마르크를 제공하여 약 1,800여개의 동독 지역 특별 환경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이 지원 조치의 역점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급수(給水)
- 하수 처리/배수
- 쓰레기 관리/쓰레기 처리장

연방 정부는 추가적으로 환경 오염 경감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에 따른 38개 프로젝트에 대해 4억 마르크를 지원했다(부록 Nr. 170-171 그림 참조).

3.1 상수도

통일 직후에 나온 초기의 연구들을 보면 동독 주민의 약 50% 정도만이 규정에 맞는 식수를 공급받고 있었다(부록 Nr. 172 그림 참조).

연방 정부는 이미 1990년 최초의 조치들을 실시했는데, 이 조치들의 목적은 인간과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동독 지역에 투입된 “식수 응급조치” 전문 위원회(FKST)는 무엇보다 시급한 정수 조치의 조정과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을 벌였다.

1990/91년중 상수도 부문 187개의 긴급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총 1억 190만 마르크가 지출되었다. 또 다른 139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동독 부흥” 공동대책에 의한 1억 2,950만 마르크의 지원이 있었다. 연방 정부는 1991/92년중 위생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식수를 공급하는데 있어 시급

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4억 마르크 이상을 지출했다.

이중 중요한 조치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질산염(鹽)가가 높은 시설물의 폐쇄와 중앙 상수도 시설 연결 작업
- 단기간에 걸친 새로운 상수도관의 건설
- 보건상 문제가 없는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급수 설비에 있어 정수기술의 개선
- 상수도원과 식수의 질에 대한 감시 강화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동독 주정부들의 보고에 따르면 상수도관의 약 절반 정도는 재정비되어야 한다. 한계 수치를 넘어서는 2,500개의 상수도 시설들에 대한 재정비 수요가 전체적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조치들에 소요될 투자 비용은 약 30억 마르크에 이른다.

또 다른 시급한 사안은 식수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역점을 둔 정화 조치를 필요로 한다:

- 급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추가 설비
- 급수망의 재정비(30%까지 손실된 상태임)
- 집수지(集水地) 및 수질 보호 지역의 재정비

식수 확보와 하수 처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식수의 약 30%는 지표수(地表水)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윤작업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불충분한 하수 처리는 식수 정화 작업에 몇 배나 더 많은 비용을 가져다 주고, 보건상 위험들을 야기시킨다.

하수 정화 시설의 미비로 구동독의 강물의 42%, 저수물의 24%는 막대한

비용의 기술을 투입해도 더 이상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여러 부문에 있어 동독의 물은 일반 하드렛물이나 용수(用水)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부록 Nr. 173-174 그림 참조).

구동독 상하수도업체(WAB)의 지지부진한 해체 작업은 식수 공급의 과감한 재정비 작업, 그리고 하수 처리 시설의 확충 작업에 있어 커다란 장애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소유권 지분을 지방 자치 단체와 이들이 정한 합리적인 규모의 연합체들에게 이관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경제 발전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경제 장관들과 환경 장관들은 1991년 12월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동독 지역의 식수 공급과 하수 처리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한 정치적인 행동 기준과 권고 사항들을 발표했다. 적절한 구조 및 기업 구상을 갖출 경우 능률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2 하수 처리

서독에서는 주민들의 90%가 생물학적 정화 시설에 연결되어 있는데 비해, 동독에서는 그 연결 수준이 36%에 불과했다. 또한 동독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산업 폐수의 약 95%가 전혀 정화되지 않거나 아주 불충분한 정도로 정화되었다. 서독에서는 주민의 92%가 하수도 시설에 연결되어 있었으나, 동독 주민들의 하수도 연결률은 1990년 말 기준으로 77%에 불과했다(부록 Nr. 175 그림 참조).

심각한 수질 오염의 주원인은 폐수를 전혀 정화하지 않거나 또는 정화 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정화하지 않고 방출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과거 구동독의 공업 중심지에 해당한다. 1990년 이후 경제적·환경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없는 노후한 시설들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오염 부담이 줄어든 상태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질 오염부담이 존재하고 있다. 계

다가 특히 농업 부문에서 방출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오염 물질의 침해가 있다(부록 Nr. 176 그림 참조).

하수 처리의 개선을 위해 환경보호 프로그램,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 등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하수 정화 조치를 위해 1990년 - 1992년 기간 중 6억 7,040만 마르크를 지출했다. 추가로 지방 자치 단체 대부 프로그램에 의한 총 174억 마르크중 90억 마르크가 환경 보호 조치에 투자되었는데, 이중 대부분이 바로 수리(水利) 부문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이는 필요한 과제중의 일부를 시작하는데 불과했다:

- 지방 자치 단체의 전역에 걸친 하수 처리 기술의 개발. 주민 2,000명 이하의 6,000개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하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1만 8,000 킬로미터의 하수도망을 건설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생물학적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함.
- 주민 1만명 이상의 224개 도시(이중 35개 도시는 5만명 이상임)의 경우 또한 1991년 5월 21일 현재 지방 자치 단체 하수 처리에 관한 EU 기준(91/271)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자양물 제거를 포함한 생물학적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 함. 이 기준에 의하면 전체 주민의 2/3에 대한 정화 시설이 1998년 12월말까지 신축 내지는 확충되어야 함.

하수도를 포함한 정화 시설의 설치에만 앞으로 10년 - 15년간 적어도 1,000억 마르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3 쓰레기 처리

동독 지역은 또한 새로운 쓰레기 관리 체계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과거 동독의 여러 지역에 산재한 법규에 맞지 않는 처리 시설, 그리고 Sero-System의 붕괴에 기인한다.

환경 보호라는 요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쓰레기 처리 부문에서도 그 폐해를 가져왔다. 11,000개에 이르는 가정용 쓰레기 처리장 중 120개 처리장만이 제대로된 적치장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1,000여개는 통제를 받는 적치장이었으나, 나머지 1만개는 야적장과 같은 적치장으로 통상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은채 운영되었다. 처리 시스템의 노후화와 여러 산업 지역 및 상업 지역에서의 유독성 물질의 소홀한 취급 등은 심각한 정도의 수많은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신연방주들은 즉시 규정에 맞지 않는 적치장들을 폐쇄하고, 법적인 기준 및 기술적인 요건을 갖춘 적치장들을 계획하는 작업,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를 새로 설립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92년말까지 계속 사용되어진 적치장의 수는 11,000개 이상에서 777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5년 이 지날 때까지 설립할 적치장은 8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부록 Nr. 177-178 그림/표 참조).

연방 정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총 2억 4,700만 마르크를 지출, 447개의 쓰레기처리 부문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동독 지역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감시가 필요한 쓰레기가 얼마나 생겨날지 진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신연방주들은 쓰레기 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른 특수 쓰레기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보아 동독 지역의 경제가 긍정적인 발전을 한다고 볼 때, 특수 쓰레기의 양은 상당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4 민간경제에 의한 해결책

급수, 하수,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같은 부문은 고액의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는 민간의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인프라스트럭처 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동독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은 자체적으로는 조직상·재정상 문제들을 안고 있어 수리 경제 및 쓰레기 관리의 과제들을 실현하는데 있어 민간 경제를 끌어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다. 민간 참여는 동시에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들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경쟁을 가능하게 해 가격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부록 Nr. 175 그림 참조).

튀링엔주 알텐부르크(Altenburg) 시의 경우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 진정한 경쟁이 어떻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주었는데, 하나의 운영 모델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같은 처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1억 마르크에서 5천만 마르크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비용 절감이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 운영업체의 경우 수질 정화를 미리 확정된 가격으로 보장해야만 하므로 과도한 정화 시설, 또는 전적으로 운영업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고비용의 정화 시설은 설립하지 않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때문이다. 저렴한 비용외에도 민간경제에 의한 해결책은 특히 경쟁을 통해 성능이 좋은 환경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의 확충을 촉진하고 이로써 전체적으로는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근본적으로 기여한다.

그동안 동독 지역에는 점점 더 많은 하수 처리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일부는 이미 건설된 상태이며, 또한 민간 기업들이 시설 운영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운영업체로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 반대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와 하수 처리 단체들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민간 경제에 의한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환경성은 1991/1992년 중 “동독 지역 민간경제에 의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총 8개의 프로젝트 구상에 참여했다. 동독 지역 각 신연방주들은 적어도 하나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하수 처리 단체가 공공 입찰 또는 계약 작성과 관련해 조언을 제

공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다.

실증적 보고의 형태로 총괄된 결과들이 동독 신연방주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 보내졌다. 이 보고는 또한 운영 모델, 협력 모델에 관한 모범 계약들에 의해 보완되었다. 이 실증적 보고에 나타난 실례들은 민간 운영 모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로써 환경 부문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작업을 촉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방, 신연방 주정부, 그리고 경제 단체들이 제출한 한 보고서에는 환경 부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민간 경제의 투입 여건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제안들이 총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4. 도시 건설 및 지역 개발

4.1 신연방주의 도시 건설 관련 혁신

4.1.1 통일이전의 상황

구동독의 도시 건설 상황을 보면 심각한 결점들이 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50년 이상이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동독 지역의 도시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은 도시 건설이라는 면에서 전반적인 재정비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비 작업은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시작하여 가치있는 수많은 건축물들, 주택 지역등을 포함한다.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조립 방식으로 지어진 신흥 주택 지구 및 인프라스트럭처 시설 또한 시급한 정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아직 현존하는 역사적인 도심 지역을 기념물로 보호된 저체 건물들과 더불어 보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건물들의 파손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4.1.2 도시 건설 혁신의 법적 기초

도시 건축상 필요한 법적 기초는 통일조약과 더불어 건축법전에 한시

적인 특별 규정을 삽입시킴으로써 직접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규는 구동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고, 도시 건축상의 법규 적용을 상당히 간소화시켰다. 이는 시급한 건축 투자를 건축법적으로 허용하는 일을 용이하게 해주고, 동시에 규정에 맞는 도시 건설상의 발전을 보장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강조할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건축법 제34조, 35조는 도시 설계도에 의하지 않은 건축 계획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새로운 기획, 개발 계획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동독 지역의 지방 자치 단체들이 건축법 제34조, 35조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정관을 통해 특정한 투자가의 구체적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부지 이용 계획을 마련하기 이전에 미리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됨.

- 부지의 일부만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가능성이 생겨남. 이는 지방 자치 단체가 예비중인 건축 실행 계획을 마련할 때, 도시 개발이라는 면에서 일정한 지역이 계획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지역의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도시건설계약을 지방 자치 단체의 등가(等價)적인 행동 형태로 맺을 수 있도록 함.

신연방주들에서는 서독의 모범적인 건축 법규에 상응하는 단일한 건축 법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신연방주의 건축 법규에 들어 있는 특수한 절차 같은 것을 달리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통일조약이 의결된 직후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들을 대상으로 지방 자치

단체를 위한 실무 중심의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중 강조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이미 1990년초 신연방주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들에 발령이 된 건축법 공동 도입령.
- 건축 법규 및 건축 기술 규정의 공동 도입령
- 건축법에서 현안이 되는 개별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침들

이와 아울러 시장들이나 지방 자치 단체, 광역 단체의 행정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축실행 계획과 건축 허가에 관한 문제를 교육하고 실행상의 결점들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동독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에 걸쳐 실행하였다.

1993년 5월 1일 투자 완화 및 주택 건축 부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독 지역에 대한 새로운 완화 조치들이 도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법제 단일화라는 목적이 고려되었다. 도시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 법의 핵심은 도시 건축과 관련한 계획법 및 계획의 허가에 있어서 신속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같은 예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특히 주민들의 시급한 거주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있어 건축 설계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건축법전에 대한 조치법이 1997년 말까지로 연장됨. 이 조치법은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임.
- 신연방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도시 건설 관련 정관들이 허가없이 마련되고, 추가적인 면제가능성 및 사전 허가 가능성이 주어지며, 허가기간이 단축됨.

연방 정부는 1991년 6월 20일 국회 및 정부 소재지에 관한 연방 하원의 결의를 기초로 특별 조치들을 도입했다.

4.1.3 도시 건설 관련 조치

연방 정부는 동독 지역의 도시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의 보존과 혁신을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연방 정부는 1990년 - 1993년 기간중 이를 위해 총 40억 마르크를 지출했다. 주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들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들에 지출한 보충 재원까지 합하면 84억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이와 관련한 세부 항목과 재원의 규모는 부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Nr. 179), 중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옛 건물의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상반기에 시작된 도시재정비 응급 프로그램(Sofortprogramm)을 속행하면서 연방 정부는 1991년부터 도시 건설 관련 재정비 및 개발 조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응급 프로그램은 2,500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시급한 건물 안전 조치나 도시 건설 관련 인프라스트럭처 조치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 건설 관련 재정비 및 개발 조치”라는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조사 및 재정비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의 건물과 도시 구역을 보존하고 혁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60개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993년에는 이 프로그램의 테두리내에서 주택 지구 개발을 위한 도시 건설 관련 개발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가능한 단기간내에 새로운 주택 건축 지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1990년부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동독 지역 19개 시와 지방 자치 단체들에 있어 도시 건설 관련 시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응급 조치를 통해 신속히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 즉 시범 사업들은 도시 개발의 “학습장”이자 동기 부여의 기능을 하면서 동독 지역 다른 도시들에 대한 연방의 지원 정책 실행을 위한 사례이자 종합적인 경험 케이스가 되고 있다.

동독 지역에 산재한 방대한 규모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에 대해 1991년에 처음으로 도시 건설 관련 기념물 보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 원형을 지닌 역사적인 도심지역들이 도시 건설로 인한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그동안 105개 도시가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다. 도시들의 선정 기준은 무엇보다 그 도시가 계속되는 손상을 피하고 도시 건설상의 동일성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 하는 점이었다.

도시 재정비나 상업 지구의 신축은 일반적으로 도시 건설 계획(부지 이용법, 도시설계도, 도시 건설 구획 계획)을 기초로 해서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1991년, 1992년중 동독 지역 도시들이 도시 건설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지원해 주었다. 즉 연방 정부는 각 도시들이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일반 설계 사무소에 수주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수주는 주로 동독 지역에 새로 설립된 설계 사무소나 건축 사무소에 분배했다. 총 6,000개 이상의 도시 건설 관련 계획과 정관들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 자치 단체들은 특히 부분-부지 이용 계획과 도시 설계도에 관심을 집중했다.

1993년 도시 건설 관련 계획 작업에 대한 지원은 새로운 주택 지구의 단기적 개발을 취급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된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동독 지역에 있어 기존의 상업 부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동독 부흥의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는 주택 부지의 부족 현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특히 산업 휴한지(休閒地)나 군사 부지를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 도시 건설과 관련한 거대한 신축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른바 조립식 주택 지구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급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건축 지원의 테두리 내에서 주택 현대화 및 보존 지원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 부흥은행(KfW)은 연대 협약에 따라 조립식 주택들의 재정비를 위한 저리의 융자금 형태로 100억 마르크를 대부할 예정이다.

도시 건설 측면에서 낙후된 동독 지역 도시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도시 건설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을 포함한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혁신 작업은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반면 서독 지역에서는 빠듯한 예산 사정때문에 도시 건설 장려 작업이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1.4 도시 건설 관련 연구 및 자문

통일 후 수많은 전문가 모임과 학술회의에서는 연방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동독 지역에 있어 도시 건설상의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의 하나였다. 건축법전의 법적인 장치들, 토지 경제 차원의 장치들과 조치들 외에도 특히 도시 건설 과제에 대한 자원 조달과 지원이 문제가 되었다.

“실험적 주택 건설 및 도시 건설”이라는 연구 프로그램 테두리내에서 연방 정부는 한 연구에 참여했는데, 이 연구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근거로 연방차원의 주택 건설과 도시 건설 과제들을 위한 새로운 지식들을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획득된 결과들은 연방의 주택 건설 및 도시 건설 정책에 활용된다.

이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동독 지역의 특수한 문제들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설정되었다:

- 도시 건설과 관련 대 신축 지역의 개발
- 비용 및 부지 절약적인 건축
- 도시 건설 관련 혁신
- 초지역적인 실천 구상 속에서 도시 건설 사업
- 상린(相隣) 관계 정착 2000
- 군사 시설물의 용도 전환을 통한 도시 건설 가능성
- 도시 혁신 과제에 대한 새로운 자원 조달 방안의 모색
- 도시 건설과 경제
- 도시 건설과 교통

연방 정부는 학술자문회의의 권고들을 계속 실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소재 주정부들과 공동으로 과거 구동독의 건축 연구소 및 학술 연구소들을 개편하여 4개의 연구소를 새로 설립했다. 이 연구소들의 자원 조달은 연방과 주정부 공동의 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설된 4대 연구소는 드레스덴 소재 “환경보호지역 개발 연구소”, 라이프찌히 소재 “지리 연구소”, 브란덴부르크 소재 “지역 개발 및 구조 계획 연구소”, 베를린 소재 “건축물 보존 및 현대화 연구소”를 가리킨다.

4.2 지역 개발 정책의 진로 설정

독일 통일, 유럽 통합의 가속화, 그리고 동구의 개방으로 말미암아 독일 연방 공화국이 처한 지역적인 여건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지역개발법(Raumordnungsgesetz)에 공식화되어 있는 바 모든 지역에 동등한 생활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의(大意)는 동서독 양지역간에 극복되어야 할 지역적, 인구구성적인 면에서의 커다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고도의 정치적 우선권을 가지는 장기적인 정치적 과제가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아울러 동독 지역의 지역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 지역 정책 또는 주차원의 지역 정책의 새로운 해결책과 진로의 모색이 요구된다.

기본법에 확정된 권한 분할 원칙에 따라 지역정책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는 중앙 계획 기관이 없다. 이에 따라 독일의 지역 정책은 분권화되어 있으며, 연방은 기본법 영역에서 단지 범주 설정의 권한만 갖고 있다. 그러나 연방은 수많은 전문 계획들과 프로그램들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큰 비중을 갖고 있다. 주정부들은 주차원 또는 지역 차원의 계획들을 입안하는데 있어 전지역에 걸쳐 지역 개발의 다양한 기능을 인지하고, 정선(精選)된 지역 구조 및 거주 구조가 생겨나도록 배려하는 의무를 진다. 그동안 동독 지역에는 효율적인 주계획 및 지역 계획의 확충을 위한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최초의 주개발 계획과 프로그램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동독 지역은 서독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지역 구조나 거주 구조가 아주 특이한 형태로 발전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조건지워진 것이기도 하며 과거 중앙집중식 계획 경제의 시행 과정에서 더욱 확고해진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같은 특수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것들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도시와 시골간의 현저한 격차
- 거주 구조에 있어 뚜렷한 남-북 격차
- 중심 지역망의 형성 미비와 상대적으로 적은 크기의 지방 자치 단체들

따라서 동독 지역은 주택, 작업장, 인프라스트럭처, 환경 여건등의 지역적 분배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당초의 여건을 감안할 때 1992년 연방 지역개발, 건축, 도시 건설성이 입안하고 지역 개발 장관회의에서 함께 만들어 낸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은 통일 독일의 향후의 지역 구조 및 거주 구조에 대한 전망, 진로,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향후 독일 지역 개발의 일반적인 사상은 효율적인 도시망을 갖춘 지방분권식 집중의 원리이다.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은 그 출발 단계에 있어서는 구서독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지방분권식의 지역 구조 및 거주 구조를 중요한 입지상의 잇점으로 평가했다.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도시망의 확충이라는 출발점이 설정되고, 동서독 지역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중심 시스템을 확충한다는 미래적인 진로가 설정되었다.

베를린을 제외한 - 아마도 라이프찌히와 드레스덴도 - 동독 지역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특별한 개발 수요를 지닌 도시망들이 존재한다. 이들 도시 지역들은 계속 상호 연결을 이루고 이로써 그 매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동독 지역 부흥을 위한 의식적인 지역 개발 정책의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다. 지역 개발 정책의 방향 설정을 보면 무엇보다 다음에 열거하는 도시망들이 개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도시망들의 다수는 또한 동서독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독일 내부의 경계를 통과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한자(Hansa) 도시망 (브레멘, 함부르크, 킬, 뤼벡, 슈베린, 비스마르크, 로스톡, 슈트랄준트, 그라이프스발트)
- 도시망 하노버, 브라운슈바이크, 막데부르크, 브란덴부르크, 포츠담, 베를린,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 브란덴부르크/대(大)베를린 지역 도시망(이른바 “제 3의 반지”지역)
- 도시망 엘베강 상류의 드레스덴, 험니츠, 쾰비카우 그리고 플라우엔과 호프 방향

- 튀링엔 지역의 도시망(게라, 예나, 바이마르, 에어푸르트, 아이제나흐, 여기에 바드 헤르스펠트, 풀다, 카셀을 연결)

VI. 노동법 관련 제도의 개편

1. 임금협약 자율권 및 근로 조건

1.1 통일 이전의 상황

과거 동독의 노동법 제도에는 단체 노동권, 즉 결사(結社)의 자유, 임금협약의 자율권, 노동 쟁의권이라는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들은 국가행정의 일부였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자들의 이익 단체가 아니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부재했으므로 몇몇 개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사용자들은 없었다. 게다가 구동독 노동법전의 법규에 따르면 임금의 확정도 동독 각의와 '자유 독일 노조 연합(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른바 임금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에 의해 중앙에서 결정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 9조 3항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쟁의도 구동독 노동법에는 부재했는데, 이는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의 이해와 노동자들의 이해가 결코 상충할 수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의 자율권 같은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1.2 근로 조건의 자율적 교섭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전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경직된 계획경제 체제로부터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경제 질서의 완전한 변화는 물론 노동법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같은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노동 조건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

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 있어 특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결사의 자유로서의 한 요소로서 노동법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임금협약의 자율권으로, 이는 결사체들에게 임금, 봉급, 기타 노동조건들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국가의 간섭없이 임금협약을 통해 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

물론 통일 당시에만 해도 구동독에는 제기능을 갖춘 임금협상 당사자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사용자 단체가 부재했다. '자유 독일 노련'(FDGB)은 국가 기관으로 노동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당시 구동독에서 통용된 법률 조문에 따르면 막 형성중이던 근로자 단체들에 비해 지나치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동독에는 무엇보다 동등한 권리하에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임금 협상 능력을 갖춘 조직들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했다.

'국가조약(Staatsvertrag)' 과 더불어 사회적 시장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되는 노동법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면 구동독은 1990년 7월 1일을 효력 발생 기점으로 서독의 단체 노동권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국가조약 제17조는 특히 결사의 자유, 임금협약의 자율권, 노동쟁의권이 전독일에 걸쳐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국가조약에 나타난 의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1990년 6월 21일에는 동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 이른바 임금 협약법에 관한 "외곽법(外廓法: Mantelgesetz)"이 공표되었는데, 이 임금협약법은 물론 새로운 임금 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등록된 임금협약 및 단체 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지침을 담고 있었다. '통일조약'에 의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합리화 보호협약(Rationalisierungsschutzabkommen)도 부수적인 결과를 수반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자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새로운 지침이 추가되었다.

통일 과정의 진전과 더불어 '자유 독일 노련'은 물론 구동독의 노동조합들도 해체되었다. 동시에 서독의 노동조합들이 그 조직의 범위를 동독 지역

에까지 확대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사용자 단체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신연방주에는 수많은 업종별 단체들과 주단위의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1.3 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외 발전

이미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실시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용자단체들, 개별 고용주들과 노동 조합들간에는 임금 협약의 체결이 시작되었는데, 그 수는 1992년말 기준으로 약 5천건이나 되었다. 현재 서독 지역에서 임금 협약에 의해 커버되는 거의 모든 경제 부문 및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는 동독 지역에도 완벽한 “임금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 협상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서독의 우수한 임금 구조를 수용함으로써 구동독의 단체협약을 대체했다.

그러나 동독 경제는 아직 효율성이 낮은 수준에 있어 임금협약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임금과 봉급, 그리고 기타 근로 조건 등이 아직은 서독 수준으로 조정될 수는 없었다. 동독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평균적인 기본 보수는 1991년말에는 서독 임금협약의 60%였으나 1992년말에는 73%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1993년에는 이를 더욱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질 소득은 임금 협약에서 정해진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휴가비, 연말 상여금 또는 재산에 영향을 주는 기타 급부와 같은 임금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추가급부들도 아직은 서독 수준으로 조정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독 지역에는 - 공공 부문을 제외한 -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실질 임금(Effektivlohn)¹⁰⁾이 임금요율에 의한 임금(Tariflohn)보다 일부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비해, 동독 지역에서는 임금협약에 의한 근로상황의 경우 실질임금이 요율에 의한 임금과 대체로 상응했다. 따라서 동독 지역의

10) 역주: 임금 협약에 의한 임금(Tariflohn)과 구분해서 사용되는 실질임금(Effektivlohn)이란 그때 그때의 화폐의 구매력을 감안한 임금을 말함.

실질 노동보수는 1992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서독의 63% 수준이었다.

임금 협약에 의한 기타 근로 조건에 있어 또 다른 차이는 주당 노동시간과 휴가 기간이 있다. 1992년 서독 지역의 주당 노동시간은 38시간, 동독 지역은 40시간이었고, 휴가 기간은 서독지역이 평균 29일, 동독 지역이 평균 27일이었다.

이외에도 임금 협상 당사자들은 재산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급부에 관한 협약 가능성을 활용했다. 1991년 1월 1일부터 동독지역에 발효된 재산형성법에 따라 1992년말까지 동독 지역에서는 임금협약의 대상이 된 근로자들의 약 55%에 대해 재산 형성에 효과적인 급부들에 대한 요율 협약이 체결되었다.

2. 해고 보호

사회주의적 국가 질서와 경제 질서, 그리고 이에 따른 “노동의 권리” - 이는 물론 노동의 의무에 대치되는 개념이기도 함 - 에 따라 구동독에서는 사업체의 모든 해고 조치(무기한 해고는 예외)가 다음의 조건, 즉 그 근로자에게 현재의 직장 또는 다른 직장에서 기대할만한 일자리가 제공되어 있는데 그 근로자가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는 조건하에서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질병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특정한 그룹의 해고에 대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해고를 금지하는 이 규정은 사업체의 측면에서 보면 해고라는 것이 절대적인 예외 사항이 되도록 만들었다.

한편 이같은 실질적인 해고 금지는 작업장간의 노동력의 이동 부족, 구조변화의 장애를 초래했으며, 이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소득에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1990년 7월 1일부터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의 도입과 더불어 사

회주의 체제에 의해 조건지워진 거의 완벽한 구동독의 해고 보호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가진 서독에서 통용되던 해고보호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제 사용자측은 긴급한 작업장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인격 또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구서독에서 노무직 근로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해고 기한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제 1990년 7월 1일부터는 동독 지역에서도 새로운 노동법 법규에 따라 구서독의 노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과 같은 단일한 해고 기한이 규정되었다(노동법 전 제 55조). 개정된 노동법은 또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련의 특별한 해고규정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후 1년 이하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 또는 아버지, 아이가 3세때까지 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어머니, 생후 3년까지 아이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이 과도기 규정들은 그동안 대부분 만기가 되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동독 지역에는 법적 해고 기한에 관한 특별규정(노동법 55조)이 계속 적용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연방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 서독지역의 법적 해고기한과 관련한 개정 규정이 마련되었고, 아울러 동서독 양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기한이 단일화되었다.

경제체제가 근본적인 변혁을 겪고 있는 동독 지역의 근로자들에 대해 중요한 장치인 효과적인 해고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기능을 갖춘 노동재판소의 신속한 확충이 중요하다(제 3장, V 2.1과 V 4.1 참조할 것).

3. 노동 보호

구동독의 노동 보호 시스템은 그 조직과 권한 설정에 있어 서독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구동독에서는 전체 국가의 책임이 노동 관할과 보건 관할로 나누어졌다. 노동조합들은 노동 보호 규정들의 실행을 감독하는 과제

를 안고 있었다. 결국 많은 수의 업종별 노동보호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기관들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인 노동 보호의 과제를 실현하는데 참여했다. 그러나 법제화 및 조직면에서 매우 인상적인 이 시스템은 구동독의 정치적·경제적 여건하에서는 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수십년간 설비투자를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져 생산 시설은 노후화되었다. 여러 자료들을 보면 많은 작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노동 보호 수준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님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노동 보호 부문에서도 서독의 법규와 제도들이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연방 노동 사회성은 1991년 1월 1일부로 베를린에 연방 산업의학청(Bundesanstalt für Arbeitsmedizin)을 설립했다. 이로써 독일에서는 처음으로 산업 의학 부문에서 제기능을 갖춘 연방 차원의 기관이 발족했다. 아울러 드레스덴에는 도르트문트 소재 연방 산업의학청의 새로운 부서가 설립되어 도르트문트 소재 동 기관의 과제를 보완해주고 특히 신연방주 지역의 노동 보호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통일조약의 발효와 더불어 동독 지역에서 서독의 지원하에 서독을 모델로 한 노동보호기관들이 설립되었다. 법적인 상해보험 담당 기관들이 신연방주 지역에까지 그 활동을 확대했다. 구동독 산업안전 및 작업장 의사들이 신연방주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미 통일조약에 의해 그리고 BMA(연방 노동성)와 유관기관들의 특별한 합의에 따라 예방적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이들 구동독의 전문 인력들의 적용을 위해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한 예인데, 법적 상해보험의 담당 기관들은 현재 많은 수의 구동독 출신 동료들을 재교육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 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신연방주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이 현재의 과도기를 벗어나 새로운 법을 자립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마도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편 작업장들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현대적인 작업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작업

장의 노동보호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4.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

4.1 기업 현장

구동독에서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이익 대변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들의 단독적인 이익 대표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된 구성원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들은 당과 국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

변혁의 시기에 가능한한 신속하게 구동독의 작업장에 현존하는 작업장 노동조합 지도부를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들의 대표 단체로 대체한다는 목적하에 국가조약은 1972년 제정된 서독의 기업 현장(Betriebsverfassungsgesetz)을 1990년 7월 1일부터 동독 지역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6월 30일까지 예비적인 경영협의회 선출 작업이 있었다. 추가로 1990년 10월 3일까지 민주적인 원칙에 따른 간소화된 선거 절차가 허용되어, 각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 대표체를 단기간내에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통일조약과 더불어 대변인 위원회법이 신연방주 지역에도 확대·적용되었다.

국가에 의해 설치된 자유 독일 노련(FDGB)의 단독 대표권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근로자 대표체를 갖춘 경영협의회 체제(Betriebsrätesystem)로 전환하는 작업이 동독 지역 전역에 걸쳐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의 경영협의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참여권의 범위안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온 이 제도가 동독 지역에서는 문제들을 야기시키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또한 시행되었다:

- 연방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노동조합들이 시행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 지역의 현지 근로자들이 새로운 경영참여 규정을 숙지하도록 함.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1993년 7월 31일까지 5천여개의 교육행사에 대해 약 5,900만 마르크를 지원했음.
- 신탁청 산하 기업의 분리에 관한 법(SpTrUG)이 기업 현장적인 의미에서 보장됨. 기업의 분리가 사업체의 분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영협의회의 임기도 종결되는 경우 이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이익을 계속 대변할 수 있도록 경영위원회에 최고 3개월 기간의 과도기 위임권을 부여함(신탁청 산하기업 분리에 관한 법 13조 참조).
- 기업 재정비, 민영화, 가동 중단에의 경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해고에 대해 사회적인 측면 지원이 있었음. 연방 정부의 지원하에 신탁청과 노동 조합들간의 합의에 따라 다음의 원칙, 즉 “기업이 재정부족으로 경영상의 변화가 초래될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보장도 없다”는 원칙이 동독 지역에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 신탁청과 노동조합들간의 합의는 신탁청 산하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사회 보장을 할만한 충분한 재정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들은 실현가능한 사회적 요구를 획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따라서 신탁청이 제시한 사회 보장 규모를 분배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경영 당사자들간에 위임되었음. 고용 기간, 연령, 사회적 상황, 그리고 기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경영 당사자들은 분배와 관련 이성적이고 각 기업체에 특수한 규정들을 마련할 수 있음.

4.2 기업의 공동 결정 (Unternehmensmitbestimmung)

과거 구동독에서는 기업 조직에 대한 공동 결정(경영참여)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다. 기업 차원에서의 근로자의 참여는 기껏해야 계획 설정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라는 범위내에서 기업 노조지도부의 공동 발의권의 형태로만 보장되어 있었다.

1990년 초부터 기업 차원에서 공동 결정의 형태들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언급할 만한 것들로는 1990년 1월 25일의 합작 규정(JV-Verordnung), 1990년 1월 7일의 민간 기업의 창업 및 활동에 관한 법, 그리고 1990년 3월 1일의 콤비나트 및 인민 소유 기업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사회적 시장 경제에서는 공동 결정은 근로자들과 기업간의 이해 조정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990년 5월 18일자의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조약에는 1951년 광업-공동결정법, 1956년의 공동 결정 보완법, 1976년의 공동 결정법, 1972년의 기업 현장을 동독 지역에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률의 효력 발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구조가 미비되어 있었다.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라는 면에서 감독위원회(이사회)의 활동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선거 절차 대신에 감독위원회 구성원들이 우선은 주식법(AktG) 제104조에 따라 사법적인 배정의 과정을 거쳐 대체로 결정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15개의 기업들에는 광업-공동결정이 도입되었고, 67개 기업에들에는 1976년의 공동결정법에 따른 공동결정이 도입되었다. 1952년의 기업현장법에 따른 1/3-참여를 도입한 동독 기업은 145개 기업이다(1993년 2월 2일 기준).

5. 노동 시장의 발전

신연방주의 노동 시장의 발전은 동독 경제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 위기를 반영해 준다. 이같은 구조 위기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생산 구조의 노후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생산품, 왜곡된 가격 구조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989년에만해도 구동독에는 평균 990만명이 취업을 한 상태였으나, 1992년에 총 취업자수는 63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1991년에는 170만명이 직장을 잃는등 취업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고용감축의 속도가 둔화되었다.

한편 동독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줄어들었다. 1989년말 동독지역에는 구동독 정부와 베트남, 폴란드, 모잠비크, 앙골라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12만 8,65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으나, 1992년말까지 이들 계약 근로자들의 90%가 조기에 귀국했다.

고용 감축과 더불어 동독 지역에서는 실업자의 수도 증가를 보였는데, 그러나 그 수는 고용감축의 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부록 Nr. 180 표 참조). 1990년 6월말, 즉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도입되기 직전 동독 지역의 등록 실업자는 14만 2,000명이었는데,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이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난 1990년말에는 실업자수는 67만 2,000명으로 약 50만명이 더 늘어났다. 단축노동자-특별 규정이 만료된 1992년초에는 130만명으로 늘어났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실업자수의 계속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었다. 1993년 7월중 동독 지역의 실업율은 15.3%로 서독 지역의 7.5%에 비하면 두배나 높은 편이다.

이같은 실업율의 증가로 타격을 입은 계층은 무엇보다 여성들이다. 1990년만해도 실업자수에서 여성근로자들이 48.7%(6만9,000명)를 차지했으나,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1992년 10월에는 64.9%에 이르렀고, 1993년 7월에는 전체 실업자의 64.4%를 차지했다. 실업율의 면에서 보면 1993년 동독 지역의 여성 실업율은 21.5%로 남성 실업율(11%)에 비해 두배 이상이나 된다. 여성 실업율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전통적으로 여성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들이나 직업들이 특히 구조 조정을 겪고 있으며, 둘째는 여성들의 경우는 종종 가정에서의 지위로 인한 기동성의 결여로 다른 직장(서독지역 소재 직장 포함)을 얻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실업상태를 공간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1989년-1992년간 약 360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실업율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완화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서독 지역으로의 이주와 통근 노동에 의한 것이다. 1989년 이후 신연방주의 노동상황은 약 100만명의 취업 가능 인구가 서독으로 이주하거나 통근 노동을 함으로써 상당히 해소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동독 지역에는 아직은 충분한 수는 아니지만 새로운 직장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동독 지역에서 1992년중 정상적인 장기 직장에 대한 직업 소개가 1991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은 동독 지역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은 동독 지역의 고용감축을 상당히 억제하는 방향으로 기여했다.

6.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보험을 통한 사회문제의 완화

노동시장 정책은 처음부터 신연방주의 체제 변혁 과정을 사회적으로 측면 지원해왔다. 이미 구동독에는 1990년 7월 1일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효력을 갖게 된 고용촉진법(Arbeitsförderungsgesetz)의 도입과 더불어 서독에서 그 효력을 입증받은 모든 적극적인 노동 정책 수단들이 도입되었고, 이는 또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 특별 규정들

에 의해 보완되었다.

1993년 10월 이후부터는 뉘렌베르크 소재 연방 노동청이 산하 노동 관청들과 더불어 고용촉진법에 의한 노동시장정책 수단들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체제 변화와 관련 동 기관의 임무로는 무엇보다 직업 상담과 직장 및 직업훈련자리의 증개였다. 1992년 동독 지역의 노동관청들은 66만 1,930개의 일자리를 증개했다.

이외에도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은 연방 노동청의 일련의 또 다른 서비스들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기여금 의무가 있는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한편으로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실직의 결과에 대해 경제적 인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특히 임금 보충금인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용촉진조치는 실업을 억제하거나(예를 들면 단축노동자 보조금) 이미 존재하는 실업을 제거하는(예를 들면 고용창출조치 (ABM))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단축노동자 보조금이라는 유리한 특별 규정을 통해 경제 변혁의 초기 단계에서 고용 감축을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급격히 변화된 수요상황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은 고용 조정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업들은 계획적으로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향후의 인력 수준에 관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다.

1991년 12월 31일까지 연방 노동청은 동독 지역의 해고 보호를 위해 해당 근로자의 단축조업으로 일자리가 보존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라도 단축노동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보통 단축조업시간에 대해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이 단축 노동자 보조금은 임금 협약이나 기업 규정에 의해 단축된 근로보상의 90%까지 축적될 수 있었다. 게다가 근로자들은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연금 보험 납부금과 의료 보험 납부금에 대한 보조금을 받

왔다.

1990년-1991년 기간중 단축 노동자 보조금 수혜자들의 수를 보면 이 특별 규정이 고용감축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중요했는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미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 이후 첫 두달 동안 단축 노동자의 수는 150만명에 이르렀고, 1991년 4월에는 2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최고를 기록했다. 단축 노동자-특별 규정이 만기되기 직전인 1991년 12월 31일에는 그 수는 100만으로 줄어들었고, 1992년 초에는 약 5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1993년 7월 현재에는 15만 5,000명의 단축 노동자가 있다.

한편 동독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바 조기 퇴직에 관한 규정도 동독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긴장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고연령층의 근로자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고연령층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이들 고연령층을 오히려 장기적인 실업상태에서 면하게 해준다. 전체 경제적인 면에서 보아도 일자리가 급격히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젊은 층의 근로자들을 노동 과정에 투입하여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 2월부터 시행되던 구동독의 조기 퇴직 규정을 통일조약에 의거 대체한 노인 과도기 연금(Altersübergangsgeld)은 55세가 지나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평균 순봉급의 65% 정도이며, 가능한 가장 빠른 연금 수령시까지 최고 5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장되었다. 1993년 7월 1일부터는 물론 더 이상 새로운 신청은 없다. 1993년 7월 기준 20만 6,100명에 이르는 조기퇴직연금수령자들과 64만 1,500명의 노인 과도기 연금 수혜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 두가지 규정으로만 84만 7,600명의 실업이 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창출조치(ABM)도 노동시장의 상황을 뚜렷하게 개선시켜주고 동독 경제의 전환 작업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고용창출조치는 특히 환경 보호 부문, 산업 부지 정화 부문, 인프라스트럭

처(도로 건설, 공급 및 쓰레기 처리 부문)의 개선에 있어 새롭고 현대적이며 장래전망이 좋은 일자리의 정착을 위한 전제로서 많은 고용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고용창출조치는 한편 사회 보장 부문, 여가 활동의 확충 및 유아시설 등의 부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고용창출조치(ABM)의 시행자는 공공 기관(주로 시나 지방 자치 단체), 민간 기업(주로 신탁청 산하 기업, 노동 촉진, 고용 촉진 및 구조 촉진 회사들), 교회, 사회 복지 단체등이 될 수 있다. 이 조치의 시행자들은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코스트의 최고 75%까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지역적인 상황(고실업율)에 따라 보다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 게다가 1995년말까지 동독 지역에는 ABM-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시간제 노동에 합의할 경우 보다 많은 ABM-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많은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고용창출조치(ABM)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유일한 고용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따라서 1991년 3월에 시작된 “동독부흥 공동 대응책” 범위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ABM-시행자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 연방 노동청의 재정과는 별도로 -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 창출 조치 재원이 제공되었다. 임금 코스트 보조금 외에도 공동 작업에 의해 대물 비용 재정을 위한 보조금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몇달이 지나지 않아 ABM-취업자의 수는 1991년 2월 4만 7,000명에서 1991년 9월에는 30만명으로 증가했고, 1992년 5월까지의 거의 40만 5,000명으로 늘어났다.

연방 노동청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동독 부흥 공동 대응책에 의한 ABM 지원이 199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ABM-조치의 지원금을 조세 부과를 통해 반납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망이 확충되고 효율성이 생겨남에 따라 지원 대상의 노동을 선정하는데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ABM-취업자의 수는 1992년 중반부터는 계속 감소를 보이고 있다. 1993년 7월말 현재 ABM-조치 수혜자의 수는 19만 8,300명이었다.

그러나 1993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겨난 '동독지역 고용촉진 조치'(Arbeitsförderung Ost: 고용촉진법 249조 h항)에 의해 환경 보호, 사회 봉사, 청소년 선도등의 분야에 있어 고용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가능성이 주어졌다.

경제적인 구조 변화는 근로자들의 직업면·자질면에서의 변화도 수반한다. 따라서 동독 지역의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노동시장정책적 수단은 직업 교육의 장려이다. 1991년에는 89만 2,000명의 근로자들이 직업 훈련 조치에 참가했으며, 1992년에는 그 수가 약 88만 8,000명으로 달했다. 특히 1991년 하반기와 1992년 첫 몇달간은 직업 훈련 조치 참가자수가 매달 8만명-10만명에 이르러 노동 시장의 부담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1991년중 직업 훈련 조치 참가자는 연평균 28만명, 1992년에는 연평균 49만 1,000명, 그리고 1993년 7월말에는 연평균 37만 9,000명이 직업 훈련 조치를 받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노동 가능성의 보존과 창출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들(특히 단축 노동과 ABM 조치)과 노동자의 공급 감축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들(특히 조기퇴직규정과 직업 훈련 조치)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은 1991년, 1992년중 연평균 190만명 내지 2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었다.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의 시행을 위해 1991년 295억 마르크, 1992년 406억 마르크가 지출되었다(부록 Nr. 181-182 표 참조).

VII. 사회 보장 제도의 개편

1. 신연방주 사회 보장 제도의 변화

1.1 통일 이전의 상황

사회 통합을 위해 국가조약 및 통일조약은 양 지역의 사회보장법을 서독

의 법을 기초로 개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법률의 개편은 신연방주의 사회 보장 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확충하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 보장 제도의 새로운 확충은 일차적으로는 구동독의 사회 보험에 대해 이루어졌다. 양 독일 지역의 사회 보험은 모두 독일 제국(Deutsches Reich)의 사회 보험에 그 연원을 갖고 있지만 양 지역의 상이한 정치 체제를 겪으면서 그 조직, 급부 권리(Leistungsrecht), 보험 가입 의무 그룹의 구분 등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발전을 보였다.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었던 사회 보장 제도가 구동독에서는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등을 총괄하는 단일 보험 (Einheitsversicherung)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실업보험은 폐지되었었다.

구동독의 양대 사회보험 담당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 보험과 사무직 근로자 보험은 자유 독일 노조 연합(FDGB)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모든 비독립적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모든 취업자의 85%를 차지하였다. 생산직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의 운영은 헌법적으로 FDGB의 기득권에 속했다. 협동조합 회원들, 수공업자들 및 기타 자유업자들은 구동독 재무성 직속의 국영 보험기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특별한 국가기관 종사자들(특히 동독 인민군, 국가보위부, 국립 경찰)을 제외한 모든 취업자가 사회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녔다.

사회 보험의 재원은 가입자의 기여금과 세금에 의해 대략 50%씩 조달되었다. 세금에 의한 재원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 폐질, 사고를 포함한 - 질병, 연령등에 따른 수입과 지출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험의 위험을 산출과 기여금의 산출이 어려웠다. 구동독의 사회 보험은 결국 공익적인 요소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2 1990년 이후 사회 보장 제도의 발전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에서 내려진 원칙적인 결정, 즉 서독의 사회 보장 제도를 신연방주에 확대한다는 원칙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담당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고,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대상 그룹들을 다시 정의하며, 공익 체제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고, 보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부문에서는 비국영의 담당 기관들도 조직의 재량권을 개방해주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부조 제도 (Sozialhilfesystem)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개별 담당기관들의 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Nr.183 표 참조).

이와 더불어 구동독은 국가조약에 따라 의료, 연금 및 상해 보험으로 구분되는 사회 보장 제도의 구축, 국가의 감독을 받는 공법 기관적인 성격의 자치체로서의 실업 보험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종합 사회 보험에서 개별 사회보험으로의 이행 작업을 운영면에서 잘 극복할 수 있기 위해 국가조약은 의료, 연금, 상해 보험의 공동 담당기관이 과도기적으로 존속하도록 했는데, 이는 물론 개별 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분리한다는 조건하에서였다. 1991년말까지 사회 보험 전환(轉換) 관청이 존속하면서 이같은 임무를 담당했는데, 1991년말에는 실업 보험을 포함한 개별 사회 보험 시스템이 이미 광범위하게 구축되었다.

1.2.1 실업 보험 제도의 구축

구동독에서는 이미 1990년 3월 서독의 모범을 따른 노동관청들의 설립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국가조약에 의해 발령된 구동독의 AFG(AFG-DDR)를 기초로 38개의 노동관청과 161개 지소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 10월 3일 구동독의 연방 가입 이후에는 연방 노동청 지청들이 되었다. 이와 아울러 2개의 주 노동청이 설립되었다. 연방 노동청과 그 지청들이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변혁 과정에서 생겨난 고용문제로 인해 좁어지게 된 엄청난 과제를 감안하면, 이 주 노동청은 아주 효율적인 행정 기관임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독 노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상당한 인력 지원이 있었다(1992년 연평균 2,000명의 인력 지원이 있었음). 현재 동독 지역 노동행정에는 약 2만 6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1.2.2 연금 보험 제도의 구축

신연방주에는 각 주마다 근로자 연금 보험을 담당하는 주(州) 연금 공단이 설립되었다. 베를린 주 연금 공단은 동베를린에까지 그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전국적인 연금 보험 기관들, 즉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단, 연방 광업 연합회(Bundesknappschaft), 연방 해운 종사자 보험(See-kasse), 연방 철도 보험 공단 등은 그 관할 영역을 신연방주에 확대했고, 신연방주 지역에 안내 및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다.

신설된 주 보험 공단들이 전국적인 보험 담당 기관들과 공동으로 1992년 1월 1일부터 그때까지 전환 관청(Überleitungsanstalt)이 떠맡고 있던 과제들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인력의 구축면에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했다. 그동안 약 8천명에 이르는 신설 주 보험 공단(1993년 1월 현재) 근무자들의 업무훈련을 위해 많은 수의 서독 지역 주 보험공단 근무자들이 파견되었다.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단의 경우에는 베를린 및 서독 지역의 직원 280명이 동독 지역의 안내 및 상담 지점에 투입되었다. 연방 사무직 근로자 연금 공단의 동독 지역 담당 부서는 1993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1,822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동독 지역 주 보험 공단들에 제출된 연금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일정한 한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독 지역 주보험 공단들이 밀린 신청서 중 일부의 처리작업을 넘겨받고 있다.

1.2.3 농민을 위한 노후 지원 대책

동독 지역 농업부문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따르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농민을 위한 법정 노후 지원 대책이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아직 농업부문 노후 대책 보험이 설립

되어 있지 않다. 금번 회기중 계획되고 있는 농업 부문의 사회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노후 대책 보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4 상해 보험 제도의 구축

1991년 초 상해 보험의 구조가 신연방주에 이식되었다. 이 사회 보험은 그 특성상 서독 지역에 본부를 갖고 있는 직업별 조합들의 책임 구역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독 지역에 새로운 직업별 조합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해 보험 담당기관들은 1991년 1월 1일자로 전환 관청이 그동안 과도기적으로 수행해 온 모든 업무들을 넘겨 받았다.

1.2.5 의료 보험 제도의 구축

1991년 1월 1일자로 신연방주에는 서독의 부문별 의료 보험 제도가 구축되었다. 8종의 보험 종류가 이제는 동독 지역에도 진출해 있으며, 12개의 일반 지역 의료 보험(AOK)이 설립되었고, AOK 베를린은 그 관할영역을 동베를린 지역까지 확대했다. 연방 직속의 공제 의료 금고(Ersatzkrankenkasse)와 직장 의료보험(Betriebskrankenkasse), 농가 의료보험, 연방 광업 연합회, 연방 해운 종사자 의료보험 등이 이제는 동독 지역에도 확대되었다. 아울러 54개의 직장 의료보험과 36개의 동업 조합 의료 보험(Innungskrankenkasse)들이 동독지역에 새로 설립되었다. 그동안 동독 주민의 90% 이상이 법정 의료 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이다. 동독 지역 의료 보험 조합들의 의료 서비스 구축 작업도 전반적으로 완결된 상태이다. 안내 및 업무취급소 망을 조밀하게 구축한 결과 약 2만 3,000명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의료 보험 담당 기관들에 의해 새로 채용되었으며, 이 인력들의 80-89%는 동독 지역 출신의 취업자들이었다.

1.2.6 사회 부조 기관의 구축

이미 1990년 7월 1일 사회부조법(社會扶助法: Sozialhilfegesetz)의 효력 발생과 더불어 광역 자치단체들 및 이에 속하지 않은 자치시들은 사회복지

사무소(Sozialamt)를 설립해야 했다. 사회부조법은 개별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서독의 자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연방 차원의 행정지원, 기존 인력의 재교육 조치등을 통해 이 어려운 사회부조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를 완비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사회 부조금의 청구가 서독 수준보다 낮았던 것이 행정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다. 1991년 중에는 서독 지역의 자매결연 행정기관 및 초지역적 사회부조 담당기관의 강력한 지원과 일부의 경우, 상당한 행정인력 지원을 통해 주(州) 사회복지청과 초지역적인 사회 부조 담당 기관들을 구축하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처음에는 초지역적 사회 부조 담당기관의 과제들은 통일조약에 명시된대로 주 사회성에서 담당하였다. 그동안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겐 주들이 다른 사회적인 과제는 물론 초지역적인 사회 부조를 실행하는 주 관청을 설립했다. 작센주에서는 1992년 1월 1일부터 주복지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초지역적인 사회부조 담당기관의 시행업무가 몇몇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지역 사회부조 담당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동독 지역의 사회 부조 담당기관들은 서독 지역의 구조를 따라 구축 되어졌는데, 서독에서는 주정부에 의해 지정된 초지역적 사회부조기관이 일부는 국영기관이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체로 되어 있다.

2. 노후 보장, 직업 수행 불능시 및 취업 불능시의 보장

2.1 동서독간 연금 수령권 평준화를 위한 1차 조치

구동독 사회 보장 제도내에서 연금 보험은 보장이라기 보다는 공급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구동독의 연금시스템은 정태적인 연금시스템이었다. 즉 기여금 납부와 연금 신청사이의 기간중 연금 요구권이 보험가입자의 수입에 따라 조정되지 않았다. 연금의

지급은 단지 산발적으로 조정되었고, 액수도 구매력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조정되었다. 둘째는 구동독의 연금 보험은 완전한 보장을 담보해주지 못했다. 월 600 동독 마르크라는 1949년의 기여금 측정 상한선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채 적용되었는데, 보험 가입자의 평균 소득은 이미 오래 전에 이를 넘어 선 상태였다(1988년: 월 1,307 동독 마르크). 따라서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이로써 소득 이하의 보험 가입 상태였다.

한편 일반 연금보험외에 마찬가지로 정태적인 성격을 띤 자의적인 추가 연금보험(Freiwillige Zusatzrentenversicherung)이 있어 기여금 측정 상한선을 넘어서는 소득분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 보험은 일반적인 연금 보험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기능을 가졌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이 불충분한 법정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활용했다. 이외에도 몇몇 직업 그룹에만 문호가 개방된 추가보장제도, 일부 특권층에만 충분한 노후 보장을 제공해 주는 특별보장제도 등이 있었다.

국가조약의 체결과 더불어 구동독은 구동독의 노후 보장 제도를 서독의 모델에 따라 재정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조약은 임금과 기여금을 연금과 연계시킨다는 것을 연금법의 핵심 내용으로 확정하였다. 일반 연금보험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던 자발적인 추가연금보험은 1990년 6월 30일자로 폐쇄되었고, 추가보장제도, 특별 보장제도에 주어진 청구권 및 요구권은 - 불공정한 서비스와 과도한 서비스를 폐기할 경우 - 일반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연금을 임금과 기여금에 연계시키기 위해 1990년 6월 30일에 지급된 연금, 즉 기존의 연금은 1990년 7월 1일 화폐 교환과 동시에 서독의 순연금기준으로 평준화되었다. 연금 평준화는 45년의 근로 기간 및 보험가입 기간중 매년 구동독 경제계의 평균 임금 수준의 소득을 올린 자로 자발적인 추가 연금보험을 위해 자의로 기여금을 납부한 연금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연금수혜자의 연금은 구동독 평균 순임금의 70%여야 한다. 연금가입자의 근로기간 또는 기여금 납부기간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연금수혜는 이에 상응하여 높게 또는 낮게 조정되어야 한다.

단일사회보험으로부터 생겨난 연금 보험의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은 국가조약과 국가조약의 시행을 위해 구동독 인민회의가 공포한 1990년 6월 28일자 사회보장법이었다:

- 사회보험의 예산은 1990년 7월 1일자로 국가의 재정에서 제외된다.
- 재정조달의 기본 원칙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기여금을 절반씩 납부한다는 것이다. 분담율은 서독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 국가는 국가보조금을 통해 연금 보험의 지출에 참여한다. 1990년 국가는 수입과 지출간의 차액을 떠맡았다. 1990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은 연금 지급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서독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은 연금지출의 19.8%로 확정되었다.

통일조약은 입법자들에게 사회법전(SGB) VI에 들어있는 전 독일대상의 연금법(Rentenrecht)을 1992년 1월 1일자로 동독 지역에 적용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조약과 더불어 시작된 이같은 평준화 과정을 속행했다. 통일조약이 이미 1991년 1월 1일자로 전환한 바 있는 사회법전(SCG) VI의 재활법(再活法)은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급부권(Leistungsrecht)의 지속적인 이전을 위해 입법자들에게는 과도기 규정을 통해 연금수혜연령에 가까운 연령층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를 마련해주는 임무가 부과되었다.

2.2 연금법의 단일화

독일에서는 1991년 7월 25일자 연금전환법(Renten-Überleitungsgesetz)에 의해 1992년 1월 1일부터 연금법이 단일화되었다. 물론 신연방주를 대상으

로 한 연금 전환법은 아직은 몇몇 한시적인 성격의 예외 규정 및 특별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통일조약에서 요구된 신뢰 보호를 보장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동서독간의 소득 격차도 고려하고 있다.

연금 전환법의 가장 중요한 조치중 하나는 기존법에 의해 계산한 1992년 1월 1일 현재의 연금, 즉 기수령 연금에 대한 가치 재평가 작업이다.

사회법전(SGB) VI은 임금과 연금 기여금을 수령 연금과 연계시킨다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이 원칙에 근거하여 연금의 가치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이제 신연방주 지역의 연금수령자들도 일생 근로실적, 즉 취업연수 및 보험연수, 그리고 이 기간동안 받은 소득이 반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로써 연금은 이제 동독 지역의 연금수령자들에게 있어서도 일생의 근로실적에 대한 노후 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연금의 재평가란 연금을 완전히 새롭게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처리가 가능한 기존의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同化가능한 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同化가능한 연금액은 기존의 연금지급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금 전환을 통해 확정된 연금액이 기존에 지급되던 월연금보다도 적을 경우, 1995년까지 그 차액(差額)을 연금외에 보전액(Auffüllbetrag)을 별도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보전액은 연금 同化라는 구도속에서 1996년부터는 5단계에 걸쳐 소멸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보전액을 보장하고 이 금액을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연금 재평가작업은 점차적으로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면 동서독 지역의 연금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연금수령자들이 과도기간중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준다.

1992년 1월 1일부터 수령되는 연금은 서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법전(SGB) VI의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보수를 기초로 산정된다. 1996년말까

지 연금 수혜자가 되며, 사회법전(SGB) VI 및 구동독 연금법에 따라 연금 법적으로 연금 청구권이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추가적인 신뢰 보호의 형태로 비교 산정이 이루어지며 높게 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 가입자가 구동독 연금법에 의해서만 연금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자로 전독일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 법에 따라 연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신연방주에서는 임금과 봉급이 서독 지역의 임금 및 봉급수준으로 평균화되기까지는 보다 높은 임금인상율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연금 조정도 우선은 서독 지역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다. 게다가 동독지역의 연금 조정은 시간 간격이 짧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임금과 봉급이 급성장하는 이 단계에서는 연금이 임금 및 봉급 인상추세를 따르지 못해 나중에 이를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서독지역이나 동독지역에서 동일한 순연금수준을 평균화하려면, 연금 조정은 각각의 현실적인 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연금 전환법은 연금이 현실적인 보수 추세를 근거로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이후부터 이같은 조정작업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동서독 양지역에서 45년간 보험에 가입하고 각 지역의 평균 보수를 기초로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의 가상적인 인물을 설정하여 연금을 비교해보면, 1992년 이후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연금은 뚜렷한 회복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7 참조). 이 경우 두 지역의 연금은 신연방주의 최저 보수가 보다 낮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동서독 양지역의 연금 현황, 평균 연금지급액에 대해서는 부록 Nr.184-185의 표 참조).

표 7

45년간 보험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연금 비교(DM)

연도 구분	서독 지역 (A)	동독 지역 (B)	B/A (%)
90. 6. 30	1,616	407-602(M)	29-37
90. 7. 1	1,667	672	40
91. 1. 1	1,667	773	46
91. 7. 1	1,751	889	51
92. 1. 1	1,751	993	57
92. 7. 1	1,798	1,120	62
93. 1. 1	1,798	1,188	66
93. 7. 1	1,868	1,357	73

사회법전(SGB) VI의 연령 제한(Altersgrenze)의 도입은 구동독법에 있어서 아주 경직된 연금 수령의 연령 제한을 낮추거나 융통성있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제까지는 - 취업 불능(폐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65세가 지나야 연금 수령자가 될 수 있었던 남자들이 이제는 이보다 훨씬 앞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2년에만 해도 보험가입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약 10만명의 남자들이 이미 만 63세가 되는 해에, 또는 이들 중 장애자이거나 실직자인 경우는 이미 만 60세에, 다시 말해 대체로 이전보다는 조기에 연금 수령자가 될 수 있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노후 년금이 우선은 그렇게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의 경우는 60세부터의 노후 연금을 위해서는 사회법전(SGB) VI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15년을 일한 경우 60세부터 노후 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신뢰보호규정(1996년 만기)을 적용받

을 수 있다. 보통 신연방주에서는 여성의 취업율이 높았으므로 전자(前者)의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였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론 199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동독지역에서 적용되던 법에 따라 지급된 월 연금지급액에 한정되었다.

취업 수행 능력의 감소로 인한 연금 도입은 많은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직업수행불능 (Berufsunfähigkeit) 또는 취업 수행 불능 (Erwerbsunfähigkeit)에 대한 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왜냐하면 건강상 장애를 가진 취업자들의 경우 구동독의 연금법에서는 단지 적어도 그로 인해 2/3이상의 수입능력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취업 불능(廢疾) 연금 (Invalidenrent)이 주어졌다. 사회법전(SGB) VI에 따르면 이제 취업 불능에 해당하는 취업 불능(폐질) 연금외에도 직장 수행 불능 연금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직장 수행 불능이란 보험가입자의 수입 능력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1/2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 능력의 감소에 따른 연금의 도입으로 동 연금 수혜자의 수는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서독의 유족연금법(Hinterbliebenenrentenrecht)이 신연방주에 도입됨으로써 우선은 미망인들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1992년 1월 1일 전에는 미망인들은 미취업이거나 60세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3세 이하의 아이 하나가 있거나 8세 이하의 아이 두명이 있는 경우에만 과부 연금을 받았다. 과부 연금외에도 보험가입자의 연금을 받는 경우 - 대부분이 이 경우였음 - 에는 과부 연금은 대체로 1/4 수준으로만 지급되었다. (새로운) 유족 연금법은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연금 전환을 통해 78만명의 과부에게 지급되고 있는 과부 연금은 월 평균 270 마르크가 늘어났다. 또한 15만명의 과부들이 처음으로 과부 연금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1992년에만 해도 지출 초과분은 약 40억 마르크에 달했다.

국가조약과 더불어 낮은 수준의 연금을 - 일시적으로 - 높이기 위해 사

회 보조금 (Sozialzuschlag)이 도입되었는데, 연금 전환법은 이 사회보조금을 수정하는 것이었다. 동독 거주 연금 생활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회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다.

-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 지급을 받기 시작한 자
- 1990년 5월 18일 기준 동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그 수입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1992년 상반기 한도액은 독신자의 경우 월 600 마르크, 부부의 경우는 월 1,200 마르크였다. 사회보조금을 통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은 한도액까지 인상되었다. 사회보조금은 전체적인 사회보장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므로 연금 전환법은 한도액을 신연방주 지역에 통용되는 사회 부조의 법정 율과 연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992년 7월 1일부터 한도액은 처음으로 독신의 경우에는 658 마르크, 기혼의 경우에는 1054마르크로 인상되었다. 연금 보험은 연방 재원으로부터 사회보조금을 환불받는다.

3. 질병 발생시의 보장

3.1 의료 보험법의 전환

1991년 1월 1일 부터 법정 의료보험의 법률적인 기초인 사회법전(SGB) V가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었다. 동 사회법전(SGB) V에는 동독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수많은 과도기 규정들이 들어 있다.

동 법에 따라 구동독의 사회보장 담당기관에 보험을 가입한 모든 가입자가 신연방주 법정 의료보험의 회원이 되었다. 동서독 양 지역간에는 소득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무한계가 1991년 1월 1일부

터 구서독 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그동안 소득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도액은 월 2,050 마르크(1991년 상반기)에서 월 3,975 마르크(1993년 1월 1일 이후)로 인상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의 보험가입자들은 원칙적으로 서독 지역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추가지불금이 신연방주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1993년 1월 1일부터는 동서독 지역에 동일한 추가 지불금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입원과 요양의 경우 추가지불금은 예외로 하였던 바, 이 경우 추가지불금은 10 마르크에서 8 마르크로 낮아졌다(1994년 이후는 9 마르크).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공핍 한도액(Härtelfallgrenze)도 서독 지역에 비해 낮았다. 즉 추가지불의 완전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계(이른바 '사회 약관(社會約款)')가 1993년 1월 1일부터는 독신의 경우 1,092 마르크였다(서독 지역은 1,484 마르크). 또한 총소득의 기대가능한 자기 부담의 한도(이른바 '과도(過度) 요구 약관')도 서독지역에서보다 낮았다. 그러나 약제(藥劑) 추가지불의 경우는 동서독의 약제가 동일하므로 1993년 1월 1일부터 서독의 소득 한계가 신연방주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동서독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이 평준화될 때까지 의료 보험 조합들은 양 지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분리해 명시해야 한다.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에는 우선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의료보험기관들에 대해 12.8%라는 단일한 기여금 부담율이 적용되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신연방주의 의료보험기관들은 수입,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각자의 부담율을 확정할 수 있다. 이 시점부터 평균 부담율은 내려가 1993년 1월 1일 기준 12.5%로 되었다.

신연방주 지역 의료보험기관들의 재정 상황은 초기에는 서독지역 의료보험기관들의 재정상황과는 차이를 보였다. 동독 지역 의료보험들은 1991년에

는 28억 마르크의 흑자를 올린 반면, 1992년에는 이미 2억 5천만 마르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동독 지역 법정 의료보험의 재정 상태가 급속히 서독 지역과 평준화되었으므로, 이제 보건 구조법(Gesundheitsstrukturgesetz)을 통해 법정 의료보험의 안정화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에 신연방주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보건구조법은 모든 분야에 있어 신연방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으며 다수의 특별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정들은 특히 일반의사 및 치과의사들의 의료 수가, 약제 및 치료제, 병원비등의 예산에 관한 것이다.

신연방주 지역 병원 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건구조법에 의해 연방, 주정부 및 의료보험기관들이 참가하는 공동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연방은 1995년부터 2004년 기간중 연간 7억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신연방주와 의료보험기관들도 동일한 수준의 재원 조달을 담당한다.

보건구조법과 더불어 신연방주 지역에는 앞으로 몇년간 의료보험기관들의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이 지역 보건 제도의 확충이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다.

3.2 질병 발생시의 생계 보장

구동독 시절에는 직장 수행 불능의 경우에는 업체가 더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회보장의 범위에서 직장 수행 불능 시작일로부터 최고 78주간 질병보조금(Krankengeld)이 지급되었다. 직장 수행 불능이 산재(産災)로 인한 것이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질병보조금은 전체 기간에 대해 순평균소득의 100%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로자 및 조합원의 경우 질병보조금은 첫 6주 동안은 순평균소득의 90%가 지불되었으며, 7주째부터는 어린이의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자발적인 추가연금보험의 가입 여부를 고려해서 보험 가입자는 순평균소득의 50%-90%의 질병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자영업자 및 자유 직업가의 경우 질병 보조금은 어린이의 수, 자발적인 추가연금보험의 가입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되었다.

국가조약과 더불어 질병시 생계를 보장해주는 이 제도는 질병 6주간 사용주가 임금지불을 계속해 주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구동독의 노동법(AGB)의 해당 법률 조항들이 임금 및 봉급 계속지급법이 물질적으로 서독의 근로법에 근접하도록 개정되었다. 서독의 법적 여건과는 달리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노동법 115조 a - 115조 e). 이에 비해 서독에서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계속지급법(Lohnfortzahlungsgesetz)에 의해 임금 계속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업 부문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상법(HGB 63조)에 의한 봉급 계속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술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기업규정(Gewo 133조)에 의해 그리고 기타 사무직 근로자는 민법(민법 616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같은 법률상의 분열에 따른 물권(物權)상의 미미한 차이는 현재 계류중인 새로운 임금 및 봉급 계속지급법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4. 간병에 대한 보장

4.1 통일전 구동독에서의 간병 대상자의 상황

구동독법에 따르면 가정에서 부양을 받는 간병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간병(看病)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대해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지급이 있었다.

여기에는 연금수혜자들에게 20 동독 마르크에서 40 동독 마르크까지 연금과 더불어 지급해 준 간병보조금(Pflegegeld)이 있었다. 이외에도 중병자의 경우 120 동독마르크의 특별 간병보조금이 지급되었고, 맹인들의 경우에는 시력 약화정도에 따라 120 동독마르크 한도의 맹인보조금(Blindengeld)

이 있었다. 상시 간병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간병은 연금 보험에서 보험의 무가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간병 대상자들에 대한 이같은 금전적인 지급은 1992년 1월 1일자로 연금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유효한 구동독법에 따라 계속되었다.

간병대상자에 대한 가정에서의 간병은 구동독의 경우에도 주로 가족들이 담당하였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들, 과출 간호사들 그리고 교회의 봉사에 의한 지원을 받았다. 구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 여성들의 직업 활동이 많고 주택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가족에 의한 간병대상자의 간병 및 이들의 독립적인 생활영위는 서독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같은 이유에서 그리고 요양원에 입주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간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양로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했다.

양로원 및 요양원에서의 간병 대상자의 입주(入住) 부담은 외래(外來) 간병의 금전적인 지급과는 달리 사회 보장에 의한 금전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양로원에 대한 자원 조달은 오히려 국가 재정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입주자들은 자신의 연금의 대부분을 계속 수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월 120 동독마르크 이하의 운영비 기여금만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같은 입주 간병은 양로원에 입주하는 경우 자기 집에서 간병을 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돈이 간병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이로 인해 양로원 내지 요양원들은 설비가 노후화되고 기술적인 장비도 불충분한 결과를 가져왔다. 건축물의 보존 상태는 부분적으로는 폐사(閉舍)해야 할 정도였다. 게다가 시설의 초과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간병대상자들의 거주 수준 및 생활 수준이 아주 저하되었으며, 간병 인력의 간병활동은 더욱 힘들어졌다. 1인당 1:6 내지 1:7의 분배 비율로는 간병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간병활동만 가능했다. 적극적인 의미의 간병 활동이나 재활(再活)조치들은 거의 불가능했다. 부분입주의 가능성이나 간병 가족들의 휴가 또는 질병시 이들이 수행하는

간병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마찬가지로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4.2 신연방주 간병 대상자의 최근 실태

1992년 1월 1일자로 신연방주 지역의 연금법이 전환됨에 따라 구동독 법에 의한 금전적인 지불은 중단되었다. 금전적인 지불은 중단되었으나 그 대신 연금법의 전환 조치와 더불어 상당한 연금 인상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간병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간병과 관련한 특별 서비스의 중단, 특별한 부담으로 주어진 특권들의 중단을 경험했다. 이중 약 1/3은 이제는 법정 의료 보험으로부터 간병 보조금을 받고 있다. 400 마르크 수준의 이 간병 보조금은 처음부터 서독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사회 부조법(Sozialhilfegesetz)에 의한 간병보조금은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 그곳의 수입 상황, 수요 상황을 감안하여 이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동 보조금은 신연방주 지역의 소득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새롭게 책정되는데, 1993년 7월 1일부터는 281 마르크로, 특별 간병보조금은 766 마르크로 인상되었다. 그 사이 몇몇 주정부는 특정한 수요 조건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자적인 간병 보조금법을 발령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외래(外來) 사회 봉사들에 의한 가정에서의 간병활동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주었다. 가정에서 지내는 간병 대상자의 간병을 위해 민간 사회 복지단체들의 중앙 단체들과 주정부들의 협력하에 약 1000개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설립되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 간호사들, 간호보조원들 그리고 가정 파출간병인들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 복지 시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물론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 주택 여건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에 있어 단기간내에 가정 간병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가 재정에 의한 양로원의 운영은 이제 사라졌다. 서독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주해서 간병을 받는 간병대상자들은 이제 간병 비용을 스스로 부

담해야만 한다. 건물 상태의 부실로 높은 운영비, 인건비 및 물품비등이 이 제는 간병 정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400 마르크에서 2,800 마르크에 이르는 간병 비용을 입주 간병자들이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는 1993년 7월 1일 이후 평균소득자가 1,357 마르크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실제로 많은 입주 간병 대상자들은 그들의 입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사회 부조금의 청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는 입주 간병의 상황은 미미한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의 결함들, 보건상의 시설 미비, 건축물상 간병의 여러 장애 요인들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 간병 시설중 재정비가 가능한 시설은 전체 시설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동독 지역의 간병 대상자 수용시설은 평균적으로 여전히 서독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간병 자리의 40%-50%는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의 간병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신연방주에는 현재 1,400여개의 양로원에 14만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중 9만개 내지 10만개가 간병자를 위한 자리이다. 이 시설들을 서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총 투자비용은 적어도 100억 내지 170억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은 간병자들을 위한 외래(外來) 및 입주(入住)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한 지원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게다가 간병 시설들은 자치 단체 읍자프로그램의 지원 역할 사항에 속한다. 신연방주 지역 보건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응급 프로그램으로 우선은 열악한 결함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2억 마르크에 이르는 건축 조치 및 설비물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연방 정부는 또한 “간병 대상자의 간병 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1992년 6월 30일 연정(聯政)이 결의한 사회적 간병 보험(Pflegeversicherung)의 준비와 시행을 위한 간병 부문 및 행정 부문에 있어 예비 작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수요에 맞는 간병 활동의 확충이 있어야 하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신연방주 지역을 대상으로 5천만 마르크 상당의 31개 프로젝트가 승인을 얻은 상태이다.

신연방주의 간병 대상자들의 경우, 특히 입주해서 간병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통일과 더불어 이들의 삶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다. 입주 간병대상자들의 경우 거의 100%가 사회 부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간병 보험의 도입은 신연방주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회정책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왜냐하면 동 보험의 도입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간병 대상자들은 과거에 비해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와 재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상해 보험 제도

법정 상해보험법의 전환은 국가조약 발효 이후 연금법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조약의 실행을 위해 구동독 인민의회가 의결한 사회보험법은 상해 보험의 재원 조달을 1990년 7월 1일부터는 서독의 모범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즉 사용자나 단독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상해 보험의 법적인 기초로 제국 보험법 제 3권을 전환하는 작업은 통일 조약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월 1일 연금법과 더불어 진행되었다. 이때 부터 전독일에 걸쳐 단일한 상해보험법이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이 상해보험법의 목적에는 사고로 인한 보상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도 포함되어 있다.

상해 수익(傷害收益:Unfallrendite)을 규칙적으로 연동화(連動化)하고 서독법을 모범으로 하는 유가족법을 도입함으로써 연금수혜자의 수령액이 개선되었다.

구동독의 사회보장법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으며 1992년 1월 이전

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지급건들은 제국보험법에 따라 산재(産災) 및 직업병으로서 법정 보험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졌다. 1992년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으나 199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해 보험 담당기관에 알려진 사고건들은 제국 보험법에 의한 보험 보호가 성립되는 경우에만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졌다.

6. 전쟁 희생자 원호 대책

구동독에는 전쟁 상해자와 그 유족들, 과거 양심범들, 폭력행위의 희생자들 및 병역 수행으로 인한 상해자들의 부양을 위한 서독의 연방원호법(Bundesversorgungsgesetz)과 같은 법이 없었다.

1990년 8월 31일 통일조약과 더불어 연방 원호법은 1991년 1월 1일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신연방주 지역에도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신연방주 지역의 희생자들 및 유족들도 보상금 신청을 통해 건강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병의 치료 및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희생자 원호외에도 특히 연금이 지불되었는데, 그 수준은 서독지역과는 달리 연금 보험의 서독 수준대 동독 수준의 비율을 따랐다. 1993년 7월말까지 38만 3천건의 신청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33만 7천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약 23만 7천명이 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1992년 11월 4일 발효된 제 1차 사회주의 통일당(SED) 불법청산법은 무엇보다 당시 불법 판결로 인한 구금이 야기시킨 건강면에서의 손상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경우 연방 원호법에 따른 원호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7. 사회 부조

구동독에는 서독의 사회 부조(社會扶助, Sozialhilfe)에 해당하는 구호 지원(救護支援)이 완전히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우선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회 보장제도들이 서독의 모범을 따라 자기 부담 및 자기 예비적인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 사회 부조도 소득 및 재산과 연관된 기본 보험으로서 그에 적합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회 부조는 기본법에 명시된 사회적 국가 원칙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곤궁을 겪어야 하는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1991년 1월 1일부터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에는 연방 사회부조법 (Bundessozialhilfegesetz)이 효력을 갖게 되었는데,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과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복지기관 내외에서의 원조를 세분하였다. 연방 사회부조법은 구동독의 사회부조법, 사회원호규정 및 일련의 원호적인 성격을 띠는 지급금에 관한 규정들을 대체했다. 구동독법이 과도기적으로 계속 효력을 갖게 한 것은 자치 단체, 특히 이제 막 통일의 시점에 서 있는 주정부들이 효율적인 사회 부조 기관들을 준비하고 확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같이 시간적인 과도기를 설정함으로써 일차적인 사회보장법, 특히 연금법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했다. 연방 사회부조법이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보건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양로원, 요양소,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성인들을 위한 시설등을 설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던 국가에 의한 재원조달이 사라졌다.

독일의 법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시설 설립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들은 이에 대해 -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 사회 부조를 받게 된다. 연방 사회부조법(동 법은 몇몇 기준, 예를 들면 사회 부조 상급 담당기관으로서의 주정부의 설정, 가게 대표자에 대한 월정액을

400 마르크로 확정한 것, 시설물내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으로 제공가능한 현금 기부액을 처음으로 확정한 점등 몇몇 기준을 갖추고 효력을 갖게 되었음)은 이에 대해 -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목표로 - 다양한 소득 및 재산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또 다른 조치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우선 법적인 청구권은 그에 요구되는 서비스나 시설들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사용가능한 수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만 사회 부조 담당 기관들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이 조치는 사회 부조 담당기관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필요한 사회 시설 및 서비스를 재정비하고 확충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해 준다.
- 60세 이상이며 취업 불능자의 추가요구금(Mehrbedarfszuschlag)은 잠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 대신 연령, 폐질 또는 취업 불능으로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자들은 일괄적인 사회 부조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보조금(Sozialzuschlag)을 받는다. 이 사회보조금은 늦어도 1996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된다. 이는 추가요구금의 효력 발생에 대한 최후 시점이며, 이것이 조기에 효력이 발생하는가의 여부는 소득 상황 및 연금 상황에 달려 있다.
- 맹인과 간병 대상자에 대한 금전의 지급 및 사회 급부에 대한 소득 한도액은 일반적인 소득 추세를 고려하면서 점차로 서독 수준으로 조정한다. 기본 납부액의 금전 지불 및 소득 한도액은 서독 지역과 서와 같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1993년 7월 1일 새로 책정된 것을 보면 신연방주 지역의 금전 지불 및 기본 납부액은 서독 수준의 80% 내지 98%에 이르고 있다.

8. 보건 제도의 개편

구동독의 보건 제도는 국영화, 중앙집중화되었으며 계획 경제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었다. 국가의 행정당국이 보건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분배하며, 우선권을 정하고, 의료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들의 서비스 윤곽을 결정했다.

보건 제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국가가 고용한 인력이었다. 이 시스템은 자기책임을 위한 여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 외래 보건활동이든 입원 보건활동이든 모든 보건활동들이 거의 전적으로 국영 시설들에서 이루어졌다. 약제 공급도 국가에 의해 조직되었다.

구조적인 차이 외에도 구동독의 보건 제도는 여러 영역에서 공급의 차질 및 부족, 불량한 건물 상태, 불충분한 기술 장비, 계획의 오류, 경영의 오류 등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구동독의 보건 제도는 구동독 정권이 그럴듯하게 보여 주고 또 서방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양 독일 국가의 통일과 더불어 구동독의 보건 제도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보건 제도 부문에서도 명령 경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보건 부문의 구조 조정의 목적은 국영의 보건 공급체제를 다원적이고, 보조(補助), 연대성 및 자립 경영의 원칙을 따르며, 자기책임적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 의해 유지되는 공급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복잡한 구조 조정의 과정에는 모든 보건제도 종사자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연방, 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적, 물질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 민간 의료보험업체들이 설립되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치(自治) 행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조조정의 주된 부담은 주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본법의 과제 분배의 원칙에 따르면 보건 업무는 주로 주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도 신연방주의 보건 부문의 구조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즉 연방은 법적인 환경을 예비하고, 특별히 곤란을 겪는 부문에 대해 재원 조달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시범 계획을 시행하고, 확충 작업 및 개발 작업 담당 지도부를 통해 조언을 제공했으며, 보건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통일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중간 대차대조표를 보면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보건 부문 구조조정 작업은 광범위하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어느 시점에서든 주민들의 보건 서비스가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다. 수많은 결점들과 부족 현상들이 그동안 해소되었다. 보건 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뚜렷이 향상되었으며, 여러 영역에 있어 서독 수준으로 평준화되었다.

8.1 외래(外來) 의료 서비스 및 치과 의료 서비스

구동독에서 외래 치료는 자치단체 및 작업장의 외래 병원, 외래 진료소들, 국영 의원, 치과 병원, 자치단체 간호원 진료소 등이 담당하였다. 외래 진료의 주된 부분은 외래 병원(Poliklinik)이 담당했는데, 이 진료소들은 몇몇의(적어도 6개의) 전문 부서를 포괄했으며, 치료 부문외에도 의무실(특정한 만성적 질병 치료를 위한)과 예방 시설들(예를 들면 아동 및 청소년 건강 보호, 어머니 및 임산부에 대한 조언, 결핵 상담등)을 갖추고 있었다. Ambulator라고 불리는 이른바 외래 진료소들은 교외 지역이나 시골 지역, 인구가 보다 덜 밀집한 지역에서 활동한 소규모의 진료 시설들이다. 앰블런스(구급차)는 주로 병원들에 속해 있었고, 국영의 의원들은 그 조직상 외래 병원이나 외래 진료소에 편입되어 있었다. 이같은 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수는 모든 보건부문 종사자수의 30%에 달했다. 통일 전 구동독에는 약 340명의 의사와 450명의 치과 의사들만이 독자적인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

었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은 외래 진료서비스 공급 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 목적은 민간 의료서비스 제공업체들, 특히 개업 의사, 치과 의사, 약사, 자립적인 치료제 및 치료 보조제의 공급업체들을 갖춘 의료 서비스 공급 시스템의 확충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구조 조정 과정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90년말 신연방주 지역의 총 2만명의 외래 진료 의사들중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수는 10%에 불과했다. 1991년초 민영화의 물결이 밀어 닦쳤고, 이미 1991년 1월중 외래 진료활동에 종사하는 의사중 30%가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만 7,000명의 의사들(1992년 12월 31일 기준)은 의료 보험 조합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총 외래 진료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 외래 병원들이 - 10%, 그리고 전문 외래 진료소들이 나머지 10%를 담당하고 있다.

표8 과 표9 는 일반의 및 치과 의사의 수를 보여 준다.

표 8

신연방주 지역에서 개업한 의료 보험 조합 의사 및 계약 의사의 수

(동베를린 포함)

주 별	1991년 12월	1992년 12월
동베를린	1,272	1,741
브란덴부르크	2,236	2,56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775	2,040
작센	4,214	4,781
작센-안할트	2,703	2,735
튀링겐	2,477	2,665
총 계	14,677	16,526

자 료: 연방 의료보험조합 의사 협회

표 9

신연방주 지역에서 개업한 의료 보험 조합 치과 의사 및

계약 치과의사의 수 (동베를린 포함)

주 별	1991년 12월 31일	1992년 12월 31일
동베를린	883	965
브란덴부르크	1,299	1,65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053	1,263
작센	2,968	2,986
작센-안할트	1,400	1,553
튀링겐	1,599	1,720
총 계	9,708	10,137

자 료: 연방 의료보험조합 의사 협회

과거 외래 병원들은 우선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법률에 의거 외래 의료보험조합 의료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받고 있다(사회법전 SGB V 311조 2항). 이 시한은 보건 구조법에 의해 1992년 10월 1일까지도 여전히 존속한 외래 병원들, 외래 진료소들, 개인 병원들, 약제 임무를 지닌 특정한 전문 분야의 전문 외래 진료소들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

1993년초 구 외래 병원들의 약 70% 이상이 해체되었거나 다른 형태의 병원, 즉 건강 센터, 개인 병원, 지방자치단체 병원 또는 개인 병원 연합으로 넘어갔다(표 10 참조).

표 10

사회복지법전(SGB) 제 5권 311조에 근거한 신연방주의 외래병원 시설 및 의사의 수 (동베를린 포함)

주 별	외래병원의 수		의사의 수	
	91. 12. 31	92. 12. 31	91. 12. 31	92. 12. 31
동베를린	80	44	627	260
브란덴부르크	83	69	366	27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60	23	288	50
작센	222	98	979	199
작센-안할트	89	47	386	156
튀링겐	61	34	235	146
총 계	595	315	2,881	1,081

자 료: 연방 의료보험조합 의사 협회

일반의 및 치과의사에 의한 외래 진료 서비스는 현재 신연방주 전역에 걸쳐 있다. 물론 정주 밀도는 아직 전체적으로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부실하다거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나타나

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표 11 참조).

표 11

신연방주 지역에서 개업한 의료보험조합 의사 및 계약 의사의 밀도*
(동베를린 포함)

주 별	1991년	1992년
동베를린	1,005.00	739.51
브란덴부르크	1,146.34	985.67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075.26	923.21
작센	1,120.87	975.43
작센-안할트	1,054.36	1,027.42
튀링겐	1,046.30	957.26

* 여기서 말하는 의사의 밀도(密度)란 의사 1인당 진료 대상 주민수를 의미하는 것임

자 료: 연방 보건성

8.2 입원 치료

입원 진료 부문에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 광역 단체 및 지구 병원의 단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특수 전문 병원, 중앙 통제식 병원들 등이 있었다. 모든 병상의 7%만을 비국영 부문 - 주로 교회에서 운영 - 이 맡고 있었다. 병원들은 매년 국가 재정으로부터의 재원 공급을 통해 운영되었는데, 이 운영 자금은 해당 병원의 지출 비용이나 공급 서비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획경제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제공되었다.

병원들의 건축물들은 평균 62년이나 낡은 것들이어서 대부분 아주 열악

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재원의 부족으로 건물 원형의 마모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다. 병원내의 기술적인 장비들, 의료 장비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신연방주 지역의 병원들의 상황은 현재도 건물 상태면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많은 병원들은 광범위한 보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병원 제도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병원 계획을 기초로 병원 병상의 수가 크게 감축되었다(표 12 참조). 이중 특히 간병 부문에 귀속시킬 수 있는 병상들은 이제는 병원 계획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다.

표 12

동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의 병원 수

구 분	1989	1990	1991
병원수	539	418	389
병상수	164,305	156,957	142,871
주민 1만명당 병상수	99.98	97.93	89.77

자 료: 독일 연방 통계청/BMG

병상수와 병원의 서비스 구조를 서독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은 앞으로 몇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는 특히 병상 가동율이 낮은 전문 영역들, 예를 들면 소아과학(小兒科學), 부인과/산부인과 등의 병상들이 그러하다. 이에 비해 다른 부문들 - 신경학/정신병학, 정형외과, 비뇨기학 - 의 경우에는 일부 새로운 병상들이 새로 확보되어야 한다.

연방은 보건 부문의 구조 조정을 위한 법적인 환경을 마련했을 뿐만 아

나라, 신연방주 지역의 입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였다.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자치 단체들을 위해 1991년중 총 53억 4천 마르크의 투자액이 제공되었다. 연방 정부와 각 주들간에 체결한 행정협약에 따르면 이 재원은 주로 특히 학교, 병원, 양로원의 재정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물론 자치 단체들은 일괄투자금의 형태로 주어진 이 재원 중의 일부만을 병원 부문에 사용하였다. 이는 시급한 재정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응급 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재원은 전적으로 단기간에 실행가능한 건물 부문, 경제적·기술적인 부문, 진료 및 치료부문의 재정비 작업에 투입되었다.

신연방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원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과감하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서독 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연방 정부는 보건구조법 제14조에서 신연방주 지역의 병원 부문 지원을 위해 1995년-2004년 기간중 연간 7억 마르크의 재정 지원을 보장할 것을 선언했다. 연방의 재정 지원 이외에도 주정부로부터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 그리고 병원 사용자 또는 비용담당자로부터 재정 분담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주정부는 병원 재원조달법에 따른 투자 재원의 의무를 지고 있고 병원 계획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별 변동이 없다.

8.3 정신병 치료

구동독의 정신병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서독이 지난 60년대 말 정신병원 개혁을 하던 초기 수준에 비견될 정도였다. 서비스 공급 구조는 중앙집권식 조직을 가졌고, 거의 전적으로 병원 중심의 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외래 진료 부문의 경우 외래 병원과 의무실에 신경정신과가 있었다. 건물상, 조직상의 결합들은 여러 곳에서 정신병 시설의 황폐화를 초래했었다.

이같은 낙후 상태는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연방주 지역의 정신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공급상황은 지금도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지금도 입원형태의 큰 정신병 병원들은 300개 내지 1,8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 초과 수용을 하고 있으며, 10개 이상의 침상을 놓은 침실, 높은 배치 오류율(최고 60%에 이름), 문제 중심의 치료없이 다양한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장기 환자들의 혼잡 수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많은 지원을 제공해왔다. “동독 부흥” 공동 대응책과 자치 단체 용자 프로그램을 통한 재원은 정신병 입원 부분의 가장 시급한 투자 수요에 사용될 수 있었다. 자질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정부는 병원 및 행정부문의 결정권자들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자조(自助) 그룹의 형성 및 운영을 지원해 왔다.

현대적인 정신병원에 중요한 외래 서비스 및 전체 서비스, 그리고 시설들을 확충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에서 연방 보건성은 “정신병원” 부문에 있어서도 시범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지원을 제공했다.

8.4 의약품 공급

구동독의 의약품 공급은 국가에 의해 조직화되어 하나의 콤비나트 형태로 합병된 14개 의약품 생산업체들이 필요 의약품의 대부분을 생산했으며, 국영 공급사무소와 12개의 공급저장소에 의해 분배되었다.

약 2천여개의 국영 약국들이 환자들과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그 수는 약 2천여종에 제한되었다. 의약품의 가격도 국가에 의해 책정되었다. 약제 종류를 보면 특히 현대적인 의약품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미비했다. 허용된 의약품의 공급량도 충분하지 않았다. 특정한 고효험의 약제들(이른바 C라고 명명된 약제들)의 공급은 단지 특정한 전문의나 의료 시설에만

공급되었다.

통일 후 즉시 서독 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들이 신연방주 지역에도 공급되었다. 구 국영 약제 도매상들은 민영화되었고, 공급 저장소들은 구서독의 도매업자들에게 넘겨졌다. 종전에는 약국들의 약제 공급은 14일이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약제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 국영 약국들의 민영화도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1992년 12월 31일까지 신연방주 지역에는 다시 약 2,200개의 민간 약국들이 설립되었다.

신연방주의 약제산업의 상황은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태에 있다. 그동안 민영화된 구동독의 약제 산업은 서독의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신연방주 지역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1991년중 동독산 약제는 여전히 5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1992년에도 매출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약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점유율이 다소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제들이 서독 지역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의 예들은 신연방주 지역의 약제 회사들이 서독의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5 공중 보건서비스

외래 의료서비스 및 입원 의료서비스 외에도 공중 보건 제도는 건강 보호, 보건 서비스의 공급, 건강 증진등에 있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동독에서는 다양한 기관들, 예를 들면 광역단체 보건소들이나 외래 병원등이 이같은 과제들을 담당했었다. 이미 1990년 8월 서독에서 통용되는 법규를 근거로 서독의 모범을 따른 보건소의 확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

다. 그동안 신연방주의 모든 광역 단체들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치 시들은 시민위주의 지역보건 센터로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보건소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 관공서는 자치 단체 차원의 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연방 보건성은 1990년, 1991년 그리고 1992년중 자질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건기관 소속 의사들과 기타 신연방주 지역의 공공 보건 서비스 부문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했는데, 이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법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질 향상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의사들은 국가 보건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8.6 건강 보호

소비자의 건강 보호 및 생필품, 담배류, 화장품류 등의 유통에 있어서의 사기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구동독에서는 수많은 생필품 관련 법규들이 있었지만, 주민 수요를 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동 법규들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구동독이 연방에 가입함으로써 생필품법 (Lebensmittelrecht)에 있어서도 우선은 여러 과도기 규정들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9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생필품 법규들이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예외없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

신연방주들은 이제 새로운 규정에 부응하는 생필품 감독기관을 확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은 연방과 서독 지역 주들의 지원을 받았다. 1990년 10월 기존의 21개 생필품 검사 기관들이 필요한 표준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자 연방 보건성은 신연방주의 생필품 감독 부문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기계를 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와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이 기구들의 사용 방법도 전달되어야 했다. 이외에도 생필품 감독 부문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법적인 지식을 갖추게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했다. 연방 보건성은 자격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신연 방주 지역의 생필품 감독 부문 종사자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을 지원했다.

9. 장애자의 재활 및 적응

서독의 사회법(SGB) I 편 10조에는 장애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장애자의 “사회적 권리”가 법률로 정착되어 있었으나, 과거 구동독은 장애자에 대한 그와 같은 법규를 갖추지 못했다. 장애자의 지위 및 보호는 오히려 수많은 지시, 규정, 지침들에 의해 정해졌다.

재활 시설 및 재활 조치의 기획을 담당한 곳은 지역 차원의 보건 및 사회 부문 관공서들이었고, 최종적인 책임은 구동독 보건 사회성이었다. 이외에도 국영 업체들과 국영 교육제도들도 책임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복잡한 재활 제도는 단일하고 중앙집권식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목적은 모든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조치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가 강화되도록 빈틈없이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재활 센터들은 이같은 목적에 봉사했다. 특히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재활 교육 지원 시설들, 보호된 작업장들 및 재활 상담소등이 여기에 속했다.

구동독에서는 특수학교를 다니거나 장애자를 위한 작업장 또는 보호된 작업부서에서 활동하는 장애자들과 그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서 이것이 불가능했던 장애자들 간에는 지원 및 배려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다. 즉 후자의 그룹에 대해서는 지원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장애자, 특히 정신장애자들의 상황이 근

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장애자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과거 구동독에서는 정신장애 어린이는 교육의 의무가 없었음), 장애자를 위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조기(早期)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통일조약으로 인해 이제는 재활(再活)부문에 있어서도 전체 독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법적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재활평준화법(Rahabilitationsangleichungsgesetz) 및 자동차지원규정은 물론 재활평준화법을 기초로 체결된 전체적인 합의 사항 및 비용 원칙들이 신연방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활 담당기관들에게도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재활 담당기관들은 처음부터 이미 서독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된 원칙들과 절차 규정들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9.1 의료 재활

구동독에서 의료 재활(medizinische Rahabilitation)은 일반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이는 모든 담당 의사 및 보건 시설들의 과제에 속하는 것이었다.

구동독에서 주종을 이룬 것은 외래(外來)에 의한 재활이었다. 일반 의료부문의 전문의, 가정의 및 직장인들이 일차적으로 재활의 과제를 담당했다. 구동독에서는 진단과 치료와는 달리 재활은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수(傳受)된 부문이 아니어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마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들이 크게 차이가 있었으며, 이같은 문제는 직업 재교육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만 극복될 수 있었다.

따라서 외래부속병원의 의무실 내지는 상담소들(예를 들면 심장-순환계-질병, 류머티즘, 종양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의사들은 상담 및 치료활동을 펼쳤으며, 자기 환자들의 직업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외에도 임상 병원들과 종합 병

원들에는 자기 개발, 직장 및 사회에서의 적응에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한 전문 외래진료소가 있었다.

자리의 부족, 넓고 미비한 시설 및 장비, 결함투성이의 건물, 수용 능력 부족, 비합리적인 계획 등은 전문적으로 잘 작성된 상담 결과들이 충분히 현실에 반영될 수 없게 했으며, 적극적인 전문 인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 병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신연방주 지역에는 특정한 질병의 의료 재활을 위한 특수 시설이 거의 없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그룹들, 예를 들면 발작 환자들, 대뇌부 손상 환자들, 하반신 마비 환자, 노령 환자들의 재활이 불충분했다. 의료적인 재활과 직업적인 재활을 묶어주는 의료-직업 재활은 거의 부재했다.

향후 몇년간의 우선적인 목표는 신연방주 지역에 질적·양적인 면에서 서독 수준의 재활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들이 신연방주들의 사회부서와 재활 담당기관들의 협력하에 이미 진행 중이다.

9.2 장애자의 직업 적응

구동독에서는 장애 청소년의 직업 교육이 가능하면 작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작업장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장애자 청소년들은 신체장애자 및 맹인들을 위한 직업교육 재활센터(RZB)나 정형외과의 직업재활부서에서 교육을 받았다. 직업교육 재활센터가 국영이었던 반면, 교회 소속 병원들에도 직업 재활 부서들이 있었다. 작업장이나 재활 센터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보건 사회 기관들의 보호된 작업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성인 장애자들의 경우에는 각 일인 일자리 내지는 업체내에서 보호를 받는 부서들(약 490개 업체, 6,200개 자리), 가정 작업 또는 보건 사회부서

(7,500개 일자리), 40개의 자선단체의 “근로치료작업장”(2천개 일자리)에서 보호된 일을 할 수 있었다. 보건 사회 부서의 보호된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들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신연방주 지역에는 현재 질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 서독의 시설 수준에 맞는 장애인 직장 적응을 위한 시설들을 과감히 확충중인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약 2,500개의 직업전환교육 자리를 갖춘 성인장애자를 위한 7개 직업 장려 작업장
- 약 1,800개의 직업 교육 자리를 갖춘 청소년 장애자를 위한 8개 직업 교육장

모든 직업 장려작업장 및 직업 교육장들은 그동안 - 일부는 아직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현재 적어도 16억 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1991년중 연방 정부는 이를 위해 1억 5,700만 마르크의 연방 재원을 제공했다.

또 다른 노력들은 신연방주 지역에 있는 현재 17,000개의 자리를 갖춘 약 160여개의 인정된 작업장의 수준을 서독 작업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다른 작업장들을 확충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통일 시점인 1990년 10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동독 지역에는 240개의 재활시설(약 14,000개 자리)이 있었으며, 중앙의 구동독 사회 보장 부문의 재원으로 운영되었다. 구동독의 법에 의해 잠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 작업장들은 통일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확충 과정에 놓여 있는 작업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인정을 기초로해서 이 작업장들에는 접수부문, 직업훈련부문, 작업 부문등이 새로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신연방주들은 우선은 주정부 재정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기존의 작업장들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장애자용 작업장에 대한 각 재원 담당자들의 비용 분담율을 협상하고 합의하는 일이 진행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작업장 종사자들은 장애자용 작업장의 근무 부서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직업 훈련 형태의 직업 촉진 교육 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종사자들이 구동독 시절 이미 하나의 보호된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그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작업장과 비용분담자들간의 협약을 통해 이같은 장애자들의 청구권을 고려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약 3만개의 작업장 자리가 새로 생겨 나거나 현대화 되거나 또는 일정할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신연방주 지역의 작업장 및 사택 확충을 위해 1991년중 6,300만 마르크의 연방 재정과 3,200만 마르크의 장애자 조정 기금이 소요되었다. 1992년에는 1억 3,600만 마르크, 1993년에는 1억 2,800만 마르크의 조정 기금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재까지 총 3억 6,000만 마르크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3 중(重)장애자 현황

구동독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자들이 약 130만명이 있었으며, 노동법에는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보호 규정들이 들어 있다. 고용 의무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 유명무실했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상쇄금(Ausgleichsabgabe) 지불을 위한 의무는 1990년 이후에서 비로소 적용되고 있다.

중장애자법의 전환을 통해 중장애자들의 직업 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들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중장애자 협회가 장애자들을 확인하고 중장애자 증명서를 발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993년 6월 30일까지 신연방주 지역에 새로 확충된 행정부문은 120만건의 신청건중 이미 85%를 처리했다.

1992년 연방 정부와 구동독 철도기업인 독일 제국철도(DR)는 II급부터 IV급에 이르는 중장애자 증명서 소지자들에게는 편도 기차여행의 경우 일년에 두번 50% 할인혜택을 주었는데, 1993년에도 이 혜택은 연장되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한 운임료 결손분은 연방 재정에서 보충된다.

현재 신연방주에서 실직중인 중장애자의 수는 약 3만명으로, 이는 이 지역의 경제 구조조정작업으로 인해 늘어난 숫자이다.

서독 지역도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연방 공공 부문에 중장애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의결했다(예를 들면 빈 자리가 채워지기전 적절한 실직자가 있는지를 노동관청에 의무적으로 조회).

10. 민간 사회복지사업 구조의 구축 및 자조(自助)단체의 구축 지원

구동독의 민간 사회복지사업(Freie Wohlfahrtspflege)은 과거의 정치 상황 하에서는 주변부 - 특히 교회의 영역 - 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다. 민간의 다양한 사회 시설과 서비스들은 부재했으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권장되지 않았다.

통일조약 제32조에는 “민간 사회 복지 사업 단체들과 민간 청소년 선도 단체들이 그 시설 및 서비스와 더불어 기본법의 사회적 국가 실현에 반드시 기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단체들의 공동의 목표는 앞으로 몇년간 역동적인 과정을 거쳐 신연방주 지역에 서독과 같은 사회적 간접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1990년-1992년 기간중 거의 5천만 마르크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하여 동독 지역에 사회복지사업의 구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지원했다.

또 다른 연방 차원의 응급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전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 복지 시설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이 가능했으며, 양로원 시설 및 장애인 시설에 대한 재정비 조치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었다. 게다가 회전기금(Revolvingfunds)이 있어, 이로부터 민간 사회 복지 사업 단체들에 대해 사회 복지 시설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자가 제공되었다. 1991년과 1992년중 신연방주 지역에는 그 당면한 과제들을 감안해 매년 2억 5천만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으며, 이같은 용자는 1993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므로, 기금의 총자본액은 1억 마르크나 더 늘어나게 된다.

독일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부문에서도 시민들은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이는 자조(自助) 단체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직업적인 사회 서비스 및 보건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부상조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 여성 및 노인성이 실시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이같은 목적에 속하는 것이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신연방주의 17개 지역을 선정하여 어떻게 자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자조(自助) 그룹의 창설과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접촉장 또는 정보교류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면 서독 지역에는 약 190만명이 5천여개의 자조(自助) 단체 및 시민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여개의 접촉장들이 준비되어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경우 지난 1989년 체제 전환이 시작된 이후 특히 도시 지역에 다양한 그룹의 주도에 의한 자조 활동이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자조(自助) 활동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발전중에 있다.

연방 정부는 전 독일지역에 걸쳐 연대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이 자기 책임적인 이웃 사랑, 소규모의 조직, 자조 그룹등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응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VIII. 생태학적 생활조건의 단일화

1. 통일 이전의 상황

1.1. 구동독의 환경 훼손

구동독은 하나의 거대한 환경 오염 지역이었다. 40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자연이라는 자원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으며, 이와 더불어 필요한 구조 적용 조치는 소홀히 해왔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토양, 수질 그리고 공기의 오염상태를 야기시켰다.

독일 통일시의 환경 오염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하천 관리 시스템은 전지역에 걸쳐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흐르는 물의 3%, 그리고 고여있는 물의 1%만이 생태학적으로 온전한 상태였다. 유수(流水)의 42%와 저수(貯水)의 24%는 값비싼 기술을 사용해도 식수(食水)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하천의 물은 공업 용수나 관개 용수의 조건에도 미달했다. 또 구동독은 엘베(Elbe)강을 통해 북해(北海, Nordsee)를 크게 오염시켰다.

80만개 이상의 산업지로부터 발생하는 40억 입방미터/a의 공업 폐수 가운데 95% 이상이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가 불충분한 상태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 갔다. 주민의 36%만이 생물학적 정수(淨水) 처리 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서독지역은 90%). 그러나 정수 시설의 대부분은 단지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3,600 km에 달하는 공공 하수관중 60%-70%는 파손된 상태였다. 이 중 약 800 km는 그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재정비를 필요로 했다.

또한 지하수의 보존 상태는 구동독 시절 공업 지역과 농업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특히 작센과 튀링겐주 지역은 질산염으로 오염되었다(부록 Nr.172 그림 참조).

통독 시점에서 더욱 심한 오염을 보인 것은 바로 대기 오염이었다. 처리 시설의 미비로 매년 500만-600만 톤의 아황산가스가 배출되었으며, 이로써 구동독은 주민 1인당 아황산가스 오염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여기에도 연간 220만톤의 분진(粉塵) 오염이 있었다(부록 Nr. 186 그림 참조). 이로 인해 구동독은 유럽 국가중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였다.

또한 구동독은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톤으로 이 분야에서도 세계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이에 비해 프랑스는 7톤, 구서독은 11톤이었음).

낙후된 기술로 인해 구동독은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구서독보다 상당히 더 많은 1차 에너지를 사용했다. 구동독 발전소들의 평균 열효율은 28%로 구서독에 비해 10%나 떨어졌다. 이외에도 열조절 시설과 단열 시설의 부족으로 상당한 량의 에너지가 낭비되었다.

1,660만의 전체 동독 지역 주민들중 ① 약 430만명이 기준치 이상의 분진 공해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② 약 600만명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아황산가스 오염 지역에 살고 있었다. 물론 승용차나 화물차가 많지 않았으므로 산화질소(NO2)의 오염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부록 Nr.187-188 그림 참조).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체제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적었으므로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약 11,000개에 달하는 가정용 쓰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120개소만이 정규 매립지로 적합했고, 1,000개소는 통제를 받는 매립지였으며, 나머지 1만개소는 야적장과 같은 매립지로 통제적인 처리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채 운영되었다 (부록 Nr.177 표 참조).

가정용 쓰레기, 판매부문의 쓰레기 및 산업용 쓰레기들은 환경을 고려하

여 적절히 처리되어야 했음에도 실행이 부족했고, 또한 환경 유해 물질을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써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심각한 토양 오염 및 지하수오염 사례가 발생했다. 지질학적으로 볼때 쓰레기 적치장으로 적합치 않은 갈탄 채취장 또는 광석 채취로 생긴 동굴들이 아무런 안전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매립지로 사용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많은 경우 독성물질을 함유한 매립 물질들이 이미 직접적으로 지하수와 접촉되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부록 Nr.189 그림 참조).

많은 산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독성 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이나 부주의로 인해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야기되었다. 할레/라이프찌히 지역에서만 5,048개소의 토양 오염의 혐의가 있는 지역이 파악되었는데, 이중 553개소는 그 위험 정도가 아주 높고, 2,299개소는 그 위험 정도가 보통이며, 1,637개소는 그 위험 정도가 낮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동독에는 7만개소 정도의 오염 혐의 지역이 파악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구동독지역의 공업 지역이 위치했던 지역이다.

지난 40년 동안 구동독에서는 갈탄 채광을 위해 약 12만 헥타르가 파헤쳐 졌는데, 이중 약 50%정도만이 상당한 결함을 내포한 채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몇몇 황폐화된 약 100 평방킬로미터의 휴경지(休耕地)는 추후 재경작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역은 특히 수질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동독의 채광 지역인 라우지쯔(Lausitz)와 중부 독일의 갈탄 탄광 지역에 스스로 조절 가능한 수질 관리를 재회복하는 문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환경 문제에 속해 있다. 라우지쯔 지역의 강물 진입 지역인 슈프레(Spree), 슈바르쯔 엘스터(Schwarze Elster)와 마이세(Meisse) 및 중부 독일 광구에 속해 있는 몰데(Mulde), 바이세 엘스터(Weiße Elster), 플라이세(Pleiße), 자알레(Saale), 그리고 보데(Bode) 지역의 수질 관리가 지난 수십년동안 생태계를 고려치 않고 행한 채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파괴되었다.

작센과 튀링겐 지역, 그리고 작센-알할트 지역에서는 이미 중세 초기 이후로 철이나 광석 채광이 고도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평균치를 넘는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과 중금속 물질이 생태계로 흘러 들어 갔다. 비스무트(Wismut) 지역에서는 1946년 이후 우라늄 채광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환경 오염을 더욱 가중시켰다. 비스무트의 우라늄 채광은 1990년말 중단되었다.

우라늄, 철, 기타 광석 채광으로 인한 오염 혐의 면적은 약 1,500평방킬로미터이며, 총 1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여기에는 오늘날 수천개에 달하는 채광 흠더미, 수백개에 달하는 채광 시설과 적재소, 낙후한 선광 및 정련 시설을 갖춘 20개에 달하는 찌꺼기 처리 침전조가 있다. 연방 방사능 보호청(Bundesamt für Strahlenschutz)의 첫 조사에 의하면 오염지역의 대부분이 아직은 이렇다 할 방사능 오염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25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구동독지역의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의 오염 문제다. 통일된 독일이 현재 사용중이거나 과거 사용했던 군사 시설의 총면적은 100만 헥타르인데, 이중 구동독 인민군(NVA)이 사용한 2,300개소 24만 헥타르가 오염 혐의가 있으며, 토지 오염이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는 자세한 조사가 있는 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군 주둔 지역의 토지는 그 빈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오염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 유류 제품
- 일반 쓰레기 및 특별 쓰레기
- 폭발물 및 탄약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은 군사 훈련 지역, 비행장, 경비 지역과 유류 저장소이다. 4,700개에 달하는 군사용 목적에 의한 오염 혐의 지역 가운데 1/3 이상(1632개)은 동독 지역에 있으며, 이 가운데 350개소는 구소련군

주둔지, 253개소는 구동독군 주둔지에 있다.

구동독 체제는 40년간 기존의 자본스토크를 소모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낡은 산업 구조가 수십년간이나 방치되어 왔다. 산업 시설의 대부분이 현대화되지 못했다. 그 결과 산업 시설들은 비경제적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심한 오염을 야기시키는 주범의 하나가 되었다. 예를 들면 에스펜하인(Espenhain)의 갈탄 처리 공장에서는 6천명의 근로자중 2천명이 수리(修理) 분야에 종사했다.

구동독 산업 구조가 이같이 심각한 경제적, 생태학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구동독 정부는 이미 1990년 2월 첫 조업 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① 에펜하인에서의 타르 생산의 금지 ② 피르나(Pirna)에서의 비스코스 생산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집중 농법, 이물질(異物質)의 유입, 갈탄 노천 채굴 및 채굴장 봉입으로 구동독의 40% 이상의 지역이 토지 사용이라는 면에서나 생태학적인 면에서 침해를 받았다.

농업 부문에서의 산업적인 토지 이용은 지난 수십년간 해당 토지가 생태학적인 면에서 대단위로 빈곤화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특히 동물 생산과 식물 생산의 분리, 대규모 단위로 이루어진 가축 사육의 집중화, 그로 인한 과도한 시비(施肥),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지하수 함몰 현상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구동독에는 보호 가치가 있고 개발의 가능성을 가진 가치있는 대규모 면적의 자연 공간도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자연적인 생활 기반의 파괴와 심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 특정한 지역들에서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야기되기도 했다.

주목할만한 현상은 빌레펠트 지역의 경우 만성 기관지염 환자가 평균 이상으로 발생했고, 아이들의 경우 폐기능저하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들을 오염되지 않는 지역에 몇주간 요양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황화 수소와 황화 탄소물로 크게 오염된 피르나(Pirna) 지역에서는 호흡기와 코부분의 염증 및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뇌신경 계통의 질병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구동독 정부는 1990년 3월 제출한 환경 정책 개선안(Konzept für die Entwicklung der Umweltpolitik)에서 구동독의 환경 상황을 처음으로 숨김 없이 밝힌 바 있다: “동독의 환경조건은 공기, 물, 토양이 유해 물질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적, 세계적 차원의 자연 보호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1.2. 환경 관리 소홀의 원인

구동독에 있어서의 환경 부문의 위기적 상황은 실제적인 현실로서의 사회주의가 남긴 하나의 유산이다. 각 개인은 대개의 경우 환경 보호에 대해 책임을 질수도 없었고, 또 책임이 있다고도 느낄 수 없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진 결정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데, 이는 환경 보호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계획적인 경제 체제에서 완전히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계획 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므로 불량 시설은 현대화되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설들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들이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환경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로 인한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은 단기적으로 성취한 계획 달성의 성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환경 보호가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구동독에서는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통제하는 측과 통제받는 측이 여러가지 면에서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즉 한 지역의 물공급회사와 폐수처리회사가 실질적인 하천 이용자이면서 하천 오염자였으며, 하천부문

통제 조직, 즉 국가 하천감독기관은 환경 보호 및 수리경제성 장관의 관할 아래 있었다. 그가 공장 운용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자기 책임 영역내에서의 계획 목표 달성에 지장을 주게 되며, 하천 감독기관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환경보호법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계획 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결과 우선은 자본스톡크의 지속적인 개선과 결부된 “환경 수익”이 사라졌다. 이같은 환경 수익은 자연보호적인, 새로운 생산 라인과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생산 공정에 재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한때 부유한 적이 있는 한 국가의 인프라스트럭처 자본이 관리의 소홀로 소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켰다는 점도 심각한 결과의 하나이다. 그 한 예로서는 만스펠트(Mansfeld) 지역에서의 납찌끼 방치를 들 수 있는데, 이 납찌끼들은 전쟁 이전에 벽으로 둘러 쌓인 수조(水槽)로 변조되었다. 이제 수조들의 저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이 납찌끼들은 건축상 또는 다른 면에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주변의 녹지대에 버려졌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들로는 풍광을 해치는 갈탄 채굴, 건강과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우라늄 채광, 화학 삼각지대를 이루는 라이프찌/할레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고도의 독성을 가진 쓰레기들을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한 매립지에 방치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조절 장치인 시장 가격을 차단한 것은 영구적인 실책을 야기시켰고 이로써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정책의 결과는 가격면에서의 인센티브의 부족으로 상당한 환경 훼손을 불러 일으키며 자원을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에너지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동독 경제의 고립과 폐쇄화의 심화, 부족한 경제력, 그리고 경제의 후진성 등은 또한 범세계적인 환경 기술의 진보에 참여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제부문에 필수적인 구조조정 과정이 행하여지지 않았고, 동독과 서독의 환경기술적인 격차는 급격히 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 한 국민 경제의 생산 기반을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리고 중국에는 파괴시키는지 똑똑히 볼 수 있다.

구동독의 농업은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생태학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용되어 심한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 할레 근처 만스펠트 지역에서는 자급 경제를 이룬다는 목표하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구리를 채광했는데, 그 생산가는 세계 시장가격의 10배가 넘게 들어갔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결과는 수십년간 자본스톡스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소모하기만 함으로써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경제의 실책과 효율성 저하로 정화에 필요한 재원이 점점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2. 통일후 환경 개선 현황

1990년 7월 1일자로 환경 통합이 도입되면서 이같은 수많은 환경 오염 사례들은 환경 오염 정화에 최우선권을 두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강요했다. 환경 통합 후 지난 2년간 신연방주 지역에 있어 환경 정책은 환경 오염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에 집중되었다. 환경 부문에서 양 지역의 생활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평준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화폐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연방 환경법이 구동독에 도입되었다. 서서히 진행되는 동독 지역의 경제적 부흥 과정에서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의외에도 환경 오염으로 야기된 투자 장애 요인 - 생태학적 토양 오염 및 환경 보호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비 - 을 제거한다는 목적하에 환경 오염 정화라는 과제들이 점점 부각되었다.

2.1. 위험 방지: 인간과 환경의 보호

통일시의 환경 오염 문제는 그 속성상 오늘 또는 내일에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염 방지 능력은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심각한 환경 위험을 방지하는데 우선권을 줌으로써만 자연적인 생활 조건을 다시 회복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후 환경 정책의 주요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원의 즉각적인 제거와 또 다른 위험 요인들에 대한 안전조치
- 수질, 토양, 자연, 풍광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훼손 가능성의 제거

통일후 환경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들은 가동을 중단시켰고, 주정부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하에 수많은 환경 보호 긴급 조치를 실시하였다(부록 Nr.170-171 그림 참조).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지역에서는 안전을 근거로 5개의 구소련식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건설중인 3기의 발전 시설도 건설이 중지되었다. 슈텐달(Stendal) 지역에서도 2기의 구소련식 원자력 발전소 설립이 중단되었다.

응급 조치는 식수 공급과 폐수 처리부문(본서 제 5장 V 3 참조)에 중점을 두었다.

위험 방지를 위해 직접 도입된 다른 조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쓰레기 처리 시설의 안전 보장과 실질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처리 시설의 폐쇄 조치
- 토양오염(Altlasten)이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 조치의 실시
- 중금속 또는 독성 유기 물질로 심하게 오염된 토양의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제련공장이나 소각 시설 주변에서의 농업 금지 조치
- 방사능 보호 분야에서 특별히 오염된 대상물에 대한 긴급 조치

- 스모그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모그 조기경보 시스템의 구축

한편으로는 고용 창출 조치등의 지원을 받는등 분명한 지원 조치들을 실시함으로써 당장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는데, 구동독 지역에 지속적인 오염 정화 작업을 이루어지려면 후속 조치들이 요구된다.

2.2. 환경법의 도입

환경과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을 줄이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조치의 하나는 서독이 과거 몇십년간 발전시켜 온 환경법을 조속히 적용하는 것이었다. 구동독 인민회의는 이미 통일전인 1990년 6월 29일 환경 개관법(Umweltrahmengesetz)을 의결했는데, 이로써 독일 환경법의 중요한 요소들, 특히 유해물질 방출에 관한 법(Immissionsschutz), 하천 보호(Gewässerschutz), 쓰레기 관리(Abfallwirtschaft), 자연 보호법(Naturschutz), 화학 물질법(Chemikalienrecht), 방사선 보호법(Strahlenschutzrecht), 환경 영향평가법(UVP-Gesetz)등 전문법들이 구동독지역에까지 확장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또한 여러 경과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가조약 제16조는 환경 통합을 위한 법적인 기초가 되었다(제 5장 II. 2.2.3 참조).

통일조약은 구동독이 가능한한 넓은 범위에서 연방법을 직접적으로 수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은 환경법이 조약 발효와 더불어 기존의 구동독법인 환경개관법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방법으로 구동독에 효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체계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환경 개관법에 들어 있는 적용 규정들은 직접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규의 맥락속에서 각각의 전문법에 귀속되었다.

구동독 환경법의 지속적인 적용은 원칙적으로 서독에 그에 관한 특별한

법규가 없는 분야에서만 고려되었는데, 이 경우 전제 조건은 그 법규가 국제법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조약은 구동독의 우라늄광산의 정화 처리를 위해 구동독 방사선 보호법의 특정 규정들이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일조약에서 동 법규를 수용한 것은 동 법규가 채광을 위한 시설 및 오염 지역의 정화와 재활용을 위한 상세한 방사선 보호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서독에는 우라늄 광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비견할만한 법규가 부재했다.

환경법의 수용과 더불어 6개의 중요한 원칙이 생겨났는데, 이는 또한 기존의 투자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 인가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해 원칙적으로 전 독일에 걸쳐 동일한 요구 조건을 적용한다. 이는 바로 저렴한 환경비용국이라는 구동독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최신 기술에 상응하는 새로운 계획이 그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의 환경 오염에 따른 부담으로 무효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 구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형 연소 시설 규정 및 TA 대기 부문의 재정비 구상이 적용된다.
- 기존의 구시설을 취득하는 자는 그 비용부담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환경오염에 대한 공법적인 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 물리적인 환경 보호 요구를 삭제하지 않고 또한 공공의 참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절차를 단순화한다.
- 1994년 6월 30일까지의 과도 기간에 대해서는 구서독 주들의 해당 관청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진행된 연방 환경법의 수용은 기존의 환경 오염은 물

른 새로운 시설에 의한 환경 오염의 제거와 관련, 구동독 지역에 있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기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1990년 10월 3일부터 구동독에는 원칙적으로 유럽 연합의 환경법이 또한 적용된다. 그러나 유럽 각의는 환경법상의 요구 조건들의 차이, 유럽 여타 지역과 비교해 구동독 지역이 안고 있는 심한 환경 오염을 감안하여 1990년 12월 4일 두가지 법규를 발령했는데, 거기에는 환경보호관련 유럽 연합의 기준이 완전히 효력을 갖기까지 과도기 규정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규 전문은 부록 Nr. 190 참조)

총 18조로 이루어진 이 두가지 법규는 우선 과도 기간을 명시하여 동 기간이 만료되면 유럽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환경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도 기간이 만료된 후 공동체법이 또한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도기 법규는 과도 기간의 설정외에도 시기별에 걸친 단계적인 의무 보고 및 환경 정화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과도기간은 각 개별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5년 12월 31일까지이다(그러나 예를 들면 대형 연소 시설의 유해물질 방출 제한과 같은 경우는 RL 90/656/EGW 15조에 따라 과도 기간이 더 길게 설정됨).

연방 환경법 및 EU 환경법의 수용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산업부문 및 에너지 부문에 있어 구동독의 노후한 시설들은 그 안전 기준 및 방출 기준이 서독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안전상 중요한 부문의 다른 법규들과 마찬가지로 원자력법 부문도 1990년 10월 3일 이후부터는 연방법이 과도기 규정없이 적용되고 있다. 구동독법에 따라 부여되는 인가는 원자력법의 해당 규정에 의한 인가로 유효하되, 법적으로 정해진 종료 시점은 계속 유효하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들의 허

가들은 최고 1995년 6월 30일까지이며, 기타 원자력 법규에 따른 허가들은 2000년 6월 30일이면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는 무관하게 인가 관청 및 감독 관청들은 현행 원자력법에 따라 인가소지자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하다.

2.3. 지속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기초로서의 환경정화

구동독의 부흥 과정에 있어 환경 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건강한 생활 조건 및 환경 조건의 보존과 창조는 정치적인 행동에서 중심적인 계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의 질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한 지역이 생태학적으로 어떤 유산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민간 및 공공 투자결정을 위한 운신의 폭을 결정해주며 광역 단체의 발전 계획의 기초를 형성해준다. 만족스러운 환경 조건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업들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보장해주는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다.

연방과 각 주들은 연방 환경장관이 1990년 제출한 바 “구동독 환경 정화와 발전을 위한 기준 지표들”을 근거로 하여 이미 통일조약에서 환경 보호 및 자연 보호가 갖는 특별한 가치를 고려한 바 있다(구동독 환경 보호에 대해서는 연방 환경성의 안내 책자/출판물들을 참조할 것. 부록 Nr. 191)

2.3.1. 환경 정화 및 개선 프로그램

통일조약에서는 독일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 보호가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통일조약 제34조는 연방과 각 주들이 “예방 원칙, 원인 제공자 원칙, 협력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연적인 생활조건을 보호하고 적어도 서독에서 이루어 낸 높은 수준의 생태학적 삶의 조건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에 의한 책임 기준에 따라 환경 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조약 제34조의 실현을 위해 연방이 연구 개발 계획의 형태로 기여한 것중 핵심적인 것으로는 지역 중심의 환경 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의 마련 작업이다. 동 프로그램들은 특히 연구 대상 지역의 환경 부문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결정 요인들도 고려되었다.

환경 정화 및 개발 전략의 범위에서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및 동독 지역의 해당 광역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일련의 시범적인 지역 연구들을 과제로 주었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부록 Nr. 192 그림 참조). 각 연구 대상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 라이프찌히/비터펠트/할레/메르제부르크를 잇는 화학 삼각 지대
- 만스펠트 지역
- 라우지쯔의 광산 및 에너지 집중 지역
- 작센과 튀링겐의 우라늄 광산 지역
- 에르쯔 산맥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해안 지역

이같은 연구들은 의학 관련 연구들 및 여타 특별 연구들에 의해 보충되는데,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식수 조사 프로그램
- 하천 및 대기 정화 프로그램
- 산업 지역에 대한 시범 연구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전지역에 걸친 쓰레기 관리 계획
- 튀겐(Rügen)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환경의 기여
- 로슈톡 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 프로그램
- 근거리 교통에 대한 환경 단체 시범 계획(로슈톡을 사례)
- 그라이프스발트 및 볼가스트 지역의 환경 상태 연구
- 베를린 지역의 환경 자원 계획

이외에도 각 주들은 독자적인 지역 연구들을 수행했는데, 그 예로서는 작센 스위스의 전체 개발 계획과 작센 주가 내어준 연구과제로 에르쯔산맥 대기 정화 특별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다.

2.3.2. 갈탄 채광지역 정화를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

토양의 환경 오염은 구동독지역에 있어 가장 어려운 환경 문제중의 하나이다. 동독 지역에는 약 8만여개의 토양 오염 의심 지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염 가능 지역이 이같이 많다는 것은 오염 토양의 문제점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 폐차로부터 유독성의 식물보호제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해로운 다양한 쓰레기들이 특별한 보호조치없이 불법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쓰레기 저장소 또는 가동 중단된 쓰레기 매립장들.
- 독성 물질을 환경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특히 화학 부문의 노후한 산업 시설들.
- 이미 지하수와 접촉하고 있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노천 갱도의 유해물질 및 가정 쓰레기의 저장
- 우라늄 광산으로부터의 방사선 물질 오염

오염 토양은 인간이나 환경에 위협할 뿐만아니라 투자가들에 대해 엄청난 재정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이미 개별 토지의 정화를 위해 수백만 마르크 이상의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1990년 환경개관법의 오염토지정화조항과 더불어 토지소유주나 사용주가 토양 오염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면제 조치로 구동독 지역에 기업들의 정주를 보존하고 새로운 기업들의 입주를 장려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지(草地)”에 공장을 마구 설립하는 것을 막게 되었다. 그동안 68,000건의 면제 신청이 접수되어 있다. 토양 오염 면제와 관련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비용들은 별도의 책임자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정부들이 부담한다(부록 Nr.193 토양 오염 혐의 지역 참조).

따라서 연방 정부는 “환경오염 잔재”라는 투자 장애요인의 제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각 주정부들이 이제까지는 신탁청에만 제한되어 왔던 면제에 따른 비용 분담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재원 조달 규정과 관련 1992년 10월 22일에는 연방과 신연방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재원 조달 규정은 그동안 1992년 12월 1일자의 행정협약에 명시되게 되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신탁청과 주정부가 기업에 책임 면제를 해줄 경우 신탁청이 부담해야 할 결과 비용을 60:4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합의이다. 그 대상이 되는 재정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연간 10억 마르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 1월 1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민영화된 기업들 가운데 신탁청이 계약상 환경 오염에 따른 위험 방지 조치의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동의한 경우도 이 규정에 포함된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상당한 오염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75(신탁청) : 25(신연방주)라는 보다 효과적인 형태의 비용 분담이 합의되었다(부록 Nr. 194 참조)

이미 행정협약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확정된 갈탄지역 정화의 경우 1993년-1997년간 연간 15억 마르크의 재정 수요가 확정되었다. 연방 정부의 주도로 신탁청에는 갈탄 지역 정화 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이 사무실의 활동 사항을 제공해 주는 곳은 연방 환경성 산하의 한 기획단으로, 여기에는 연방 해당부서와 갈탄 생산 주정부가 집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개별적인 토양 오염 정화 구상 및 특별한 재정 수요를 포함한 기타 대형 프로젝트의 선정은 행정 협약의 시행을 위해 형성된 “연방/신탁청/주정부 공동 실무단”의 과제에 속한다. 이 작업팀은 대형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한

심의를 이미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다. 이제까지 총 19개 계획이 대형 프로젝트로 확정되었다.

베를린 주

- “슈프레(Spree)” 산업 지역(Adlershof, Rumelsburg, Oberschöneweide, Nieder- schöneweide, Johannisthal)

브란덴부르크 주

- “오라니엔부르크(Oranienburg) 지역”(Henningsdorf, Velten, Birkenwerder, Oranienburg, Technopark Gewebepark Henningsdorf GmbH)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 넵툰-바르노프 조선소, 로슈톡
- MTW 조선소, 비스마르

작센주

- SAXONIA Freiburg
- 빌렌/리펜도르프(SOW) 올레핀 공장
- Coschütz/Gittersee/Friedrichstadt
- 화학 및 금속 생산의 Lautawerk GmbH

작센-안할트주

- Buna AG

- Leuna-Werke AG
- Wolfen 필름생산 AG
- 빌레펠트-볼펜 화학 AG
- Zeitz GmbH
- 석유/지하가스 Gommern (Födersfeld Salzwedel/ Peckensen)
- Mannsfeld AG (Rohhütte Helbra, 구리-은 광산)
- “Magdeburg Rothense” 지역(Großgaserei Magdeburg, Fazerzement GmbH, Stahlgießerei Rothensee GmbH, Metallaufbereitung Magdeburg GmbH, Entstaubungstechnik, Holzhandelgeschäft)

튀링겐 주

- Kali-Werra AG(Merkers)
- Kali-Südharz AG (Sonderhausen, Bleicherode, Sollstedt, Bischofferode)
- Verwaltungs- und Verwertungsgesellschaft, Rositz

이러한 각 대형 정화 계획들은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1억 마르크 이상의 정화비용을 필요로하고 있다. 전체 19개의 대형 프로젝트에는 58억 마르크의 정화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부록 Nr. 195 그림 참조).

재원 조달 협약과 더불어 신연방주 지역에 “환경오염잔재”라는 투자 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가 형성되었다.

갈탄 정화와 할레/라이프찌히/비터펠트 화학단지에서만 환경 정화 부문에서 총 3만 2천개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새로 창출되었다.

통일시에는 연방은 우라늄 광산 조업 중단과 정화를 위한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은 비스무트(Wismut)사(구 SDAG Wismut)를 오염 정화 비용에서 면제해 줌으로써 과거 철광석과 우라늄 채취로 인한 특히 튀링겐-작센주 우라늄 채광 지역의 환경 유산을 제거하는데 특별한 책임을 떠맡았다. 광산의 조업 정지, 영업 지역의 정화와 재보존을 위해 10년-15년 기간에 대한 총 130억 마르크의 연방 재원이 마련되었다. 현재 개별 광산들을 위한 정화 계획이 마련중에 있다. 이 작업은 우라늄 채광 지역의 정화와 보존이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도이다(부록 Nr. 196 그림 참조).

광산 정화계획의 준비와 전문적인 협력, 특히 방사선 물질 오염 파악(광산 채굴에 의한 오염대장 작성)을 위해 4,500만 마르크의 연방 재원이 제공되었다.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은 과거 우라늄 지역에서의 생활 조건, 노동 조건 및 환경 조건의 개선에 근본적으로 기여했다.

2.3.3. 고용촉진조치에 의한 환경 정화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과거의 환경 오염의 과감한 정화 작업을 통해 경제적인 면, 환경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1991년중 연방 정부는 동독 부흥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거대한 대물 비용 재원 조달을 포함한 고용창출 조치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실시했다. 연방 정부는 동 조치들에 163억 마르크를 제공했다. 가장 우선적인 지원 대상은 40만명에 이르는 신연방주 지역의 고용창출조치(ABM) 해당 근로자들로, 이중 12만명이 환경 부문 근로자들이다. 이중 6만여명은 신탁청 기업에 소속되어 과거 산업 부지의 정화 및 회복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자유 매립지의 철거, 시설의 철거와 해체, 건물의 철거, 쓰레기 처리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창출조치는 처음에는 2년 시한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빠듯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 1993년 1월 1일자로 “동독지역 고용 촉진”(AFG 249h)이라는 조처에 의해 속행되고 있다(부록 Nr.197-198 그림 참조).

이로써 1997년말까지 환경 부문, 사회 서비스 부문 및 청소년 지원 부문에서 실직자 및 법률상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유동적인 부대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과 더불어 실업자보험의 납부금들과 실업자 지원을 위한 연방 재원이 처음으로 생산적인 고용에 투입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신연방주 지역에만 적용된다.

환경 정화 부문은 원칙적으로 일반 기업이 그 시행을 위임받게 되어 있다. 이로써 일반 기업은 ‘동독 지역 고용 촉진’ 조처 덕분에 경제적인 발전이 저해받지 않을 수 있다.

지원은 연방 노동성이 위에서 언급한 대상 그룹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경영주에게 임금 코스트에 대한 총괄적인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조금은 1993년의 경우 근로자당 연간 15,120 마르크로, 해당 근로자가 지원을 받지 않는 취업자 임금의 최고 90% 임금을 받거나, 시간제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취업자의 최고 80%까지 임금을 받는 경우에만 보장되었다. 이같은 방식은 지원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자유로우며 지원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경제적인 자극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동독 지역 고용 촉진’ 조치는 실업 보험이 환경 정화 조처, 사회 복지 사업 및 청소년 지원의 담당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실직자, 단축 노동자 및 이전 ABM-수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처들의 전체 비용은 충당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보면 환경 정화를 위해 1992년 10월 22일 연방 정부와

주정부들이 의결한 환경 오염 재원 조달에 관한 결의는 일종의 보조 재정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조치를 실행하는 담당업체들 또는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자기 자본 외에도 특히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지방 자치 단체의 1993년 총투자, ERP-대부, 연방 신용대여 기관들의 환경 프로그램에 관한 융자, “지역 경제 구조 개선”, “농업 구조와 연안 보호의 개선” 등이 있으며, 유럽 연합도 추가 재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3.4. 현대적인 환경 기술의 확충

기업, 생산 시설 및 산업 시설의 새로운 확충을 통한 동독 경제의 구조조정 작업은 현대적인 환경 기술을 투입하고 이로써 장기적으로 신연방주에 경쟁상의 잇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독일의 까다로운 환경 보호 법규는 신연방주의 환경 부문의 현대화 과정을 촉진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적인 환경 기술의 개발과 투입은 범세계적인 환경 위협을 고려할 때 평균 이상의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미래의 거대한 시장이 될 산업 분야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효과적인 환경 기술의 투입은 어떻게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들을 제거하는 것이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와 맞물려 있는가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넘어서 오염지역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긍정적인 도약의 기초로 변화시켜 주기도 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잔재”라는 투자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협약에 의해 마련된 재원을 구 환경 오염의 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술을 투입하는데 사용할 경우,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이 현대적인 환경 기술의 투입으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동안 현대적인 환경 기술을 투입하는 여러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시되었다. 이는 비터펠트 지역의 정수 시설 및 특수 쓰레기 소각 시설로부터 독

일의 화학 삼각지대인 라이프찌히/할레에서의 합성 수지 쓰레기와 무기물 문제 재료의 재활용센터에 이르고 있다.

현대적인 환경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이 지역 환경 부문의 발전은 라이프찌히/할레의 환경 연구 센터(UFZ) 또는 라이프찌히의 유럽 에너지 환경 공원(EUP)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2.4. 자연적인 생활 공간의 확보

구동독의 자연 보호 상황은 두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특히 물질 유입을 통해 자연 재화인 물, 공기, 토양이 심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자연 보존과 자연 재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다른 한편으로 신연방주 지역에는 멸종 위기에 있거나 희귀한 동식물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연 지역 또는 유사지역이 상당한 면적의 크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넓은 지역은 가치있는 자연 유산으로 우선적인 보호, 보존 대상이 되어야 한다.

1990년 9월에만 해도 신연방주 지역에는 5개의 국립 공원, 6개의 생태계 보존지역, 3개의 자연 공원이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그 총면적은 9,180 평방 킬로미터나 되었다. 이 자연 보호 구역 설정은 통일조약에 의해 확정되었다(부록 Nr. 199 그림 및 개관 참조).

연방 정부는 이외에도 10개의 대규모 보호지역에 대해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뤼(Rhön), 슈프레발트(Spreewald), 뤼젠 남동부 지역, 엘베강 중부 지역, 튀링거 발트, 쇼르프하이데-코린 지역등 38만 헥타르는 유네스코에 의해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 프로그램의 제 1단계 구축을 위해 1990년 1,130만 마르크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국립공원 프로그램외에도 신연방주의 90여개의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1,500만 마르크가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동독 부흥” 공동대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1990년-1991년중 310개에 달하는 자연보호 프

로젝트에 5,760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연방 정부는 이외에도 1992년 다른 프로젝트들을 지원했다:

- 연구 및 시범 계획에 100만 마르크
- 시험 및 개발 계획에 90만 마르크
-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 보호 계획에 570만 마르크

헌법상의 업무 분담 원칙에 따라 자연 보호 부문의 책임이 신연방주로 이관되었다. 그동안 신연방주들은 자연 보호 법령들을 마련했다.

자연 보호 및 환경 보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요구들과 조치들은 특히 환경 계획에 의해 제시된다. 환경 계획 기구를 신연방주 지역에도 홍보하기 위해 연방은 3개의 시범적인 환경 보전 계획들을 지원했다.

2.5. 오염 정화의 효과

신연방주의 환경 상황은 통일후 뚜렷이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수많은 응급 조치를 통해 주오염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적인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토양, 물, 대기로의 오염 물질의 유입도 대폭 줄어들었다.

이같은 환경 개선은 부분적으로는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는 노후한 산업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지만 연방과 주정부들이 주도적으로 착수한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투자의 결과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치들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 준다:

- 엘베강의 수은 오염이 이미 1990년 20톤에서 10톤으로 줄어들음 (부록 Nr. 176 그림 참조)
- 잘레(Saale)와 물데(Mulde) 지역의 오염 물질 유입량이 70% 내지

80% 감소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정화시설로부터 독해(오스트제)로 유입되는 인몰질의 유입량이 1990년 1,600톤에서 1991년 470톤으로 감소함
-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87년-1991년 기간중 48% 감소했음. 이산화탄소 외에도 아황산 가스 및 분진 배출량도 감소를 보였음(부록 Nr.186-187 그림 참조). 동 기간중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 추이를 부문별로 보면 산업분야에서 3,900만톤이 감소했고,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5,800만톤이 감소했음. 그런데 이같은 대규모의 감소에 있어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에너지 투입, 가계 부문 및 소규모 사용자의 연료의 교체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1987년-1991년중 동 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3,500만톤).

1989년에 비하면 신연방주의 대기 오염 상황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는 이미 실시되었거나 실시중인 경제 구조조정 과정외에도 대규모 연소 시설 규정과 TA-대기 규정의 실시에도 기인하고 있다. 배출량의 감소로 유해 물질 배출 상황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1980년-1988년 기간중과 비교해 보면 1990년-1992년중 신연방주 인구 밀집 지역의 평균 아황산 가스 오염은 45% 내지 65%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센, 작센-안할트주의 인구 밀집 지역의 아황산 오염은 서독 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시골지역의 경우는 신연방주 지역의 아황산 가스 농도는 서독 지역의 3배를 보여주고 있다.

분진에 의한 대기 오염도 현저히 줄어들어, 신연방주 지역에서 시골 지역은 20%-30%,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는 50% 이상의 감소를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신연방주 지역의 가동 중단, 정화 조치등으로 산화질소 가스의 방출

량은 대폭 줄어들었으나 교통부문의 발달로 부분적으로는 다시 상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연방 환경청은 신연방주 지역의 산화질소가스 배출량이 1988년 670 kt/a에서 1991년에는 600 kt/a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베를린 지역의 경우 아황산 가스 배출량은 대형 발전시설 및 소규모 연소 시설을 갈탄에서 지하가스로 전환함으로써 80%나 줄어들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엔진휘발유 중에서 납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휘발유의 판매량은 1990년 상반기 15.4%에서 1992년 5월에는 85.5%로 늘어났다(서독 지역은 84%).

3. 폴란드, 체코와의 환경 부문 협력

신연방주의 환경 상황은 이웃 국가들의 환경 상황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폴란드와 체코의 환경 오염은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신연방주 지역도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특히 보헤미아 북부 지역과 슬레지엔 북부지역의 대기 오염은 경보조치를 내려야할 정도로 심각하다. 인간의 건강과 동식물들의 보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정도이다. 폴란드의 바이젤(Weichsel)강은 전 수로의 반이 규정치를 넘는 오염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이웃국가들에 있어 유해 물질방출량을 줄이는 문제(작센 지역 아황산 가스 유입의 60%는 체코내 보헤미아 북부 지역의 발전소에서 야기되는 것임) 및 정치 개혁의 성공 여부는 직접적으로 독일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독일은 이들 국가들의 환경 문제의 해결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독일-프랑스간 사례를 따라 독일-폴란드간 환경위원회를 설

치했다. 국경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해 특별 인접국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가 실시하는 최초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호지역을 만들기 위해 오데르탈(Odertal) 남부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라이비쯔(Gleichwitz)에서는 독일의 지원하에 새로운 원거리 난방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슈비네뮌데(Schwinemünde)에서는 독일의 지원하에 정수 시설이 건설중에 있다. 향후의 또 다른 계획에는 양 국경지역의 갈탄 채광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미 신연방주에 대해 실시한 것과 같은 환경 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응급 조치가 작센/북 보헤미아/슐레지엔 지역, 이른바 “검은 삼각형” 지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과제는 EU의 협력하에 1990년 6월 독일, 폴란드, 체코의 환경부처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작업팀에 의해 수행되고 조정된다. EU-PHARE-지역 프로그램이 이 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경을 초월하는 대기측정망의 설치를 위한 구상이 합의되었고, 응급 조치 권고를 포함,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행동 계획의 입안을 위한 골격안이 제출되어 있다.

연방 정부는 이외에도 “검은 삼각지대”에 위치한 “Prunerov I” 발전소의 환경 정화를 위해 이미 1992년 2,350만 마르크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3개국 작업팀의 한 하부그룹은 산림 보호 조치를 취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엘베강의 보호를 위해 독일은 체코와 EU, 오데르강 보호를 위해서는 체코, 폴란드 그리고 EU와 협력하고 있다.

인접국인 폴란드 및 체코와의 협력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브란덴부르크 주, 그리고 작센주와 긴밀한 협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주정부들은 독-폴란드 환경위원회는 물론 환경 보호 부문에서의 국가간 공동 협력을 위한 독-폴란드 위원회, “검은 삼각지대”에서의 3국간의 작업팀, 그리고 독-폴란드 국경통과 하천 위원회에 관계자들을 파견하고 있다.

제 6 장 교육 · 학문 · 연구

I. 교육

1. 동독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구동독의 교육제도(부록 Nr. 200 도표 참조)는 - 전체적인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 “민주적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해 특징지어졌다. 이는 동독의 교육제도가 연방 분권적인 서독의 교육 제도와는 달리 중앙집권적 전체 국가의 관리하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동독 교육 제도의 양적인 목표들은 전체 국민경제계획의 일부로 제시되었으며, 국가 계획위원회가 이같은 목표들을 설정했다. 수업 내용의 계획은 이를 위해 설치된 부서들이 공표한 중앙집권적 교육 계획에 따라 마련하였다.

세계관적 · 공동체적 다원주의(多元主義)에 기초한 서독의 교육 제도와는 달리 구동독의 교육제도는 “전인적이고 조화롭게 발달된 사회주의적 인격”을 목적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사회주의적 교육 임무”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교육이 - 유치원에서 평생 교육까지 - 모든 교육 분야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졌다.

전 분야에 걸쳐 세계관적인 통제에 대한 국가의 요청은 국가에서 시달한 교육목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학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한 자주적인 권리를 갖지 못했고, 다만 사회학적인 가치 질서의 범주내에서만 교육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들을 대변하는 의무가 있었다.

다양한 조직을 갖추고 세분화된 서독의 학제(學制)와는 달리 구동독은

1965년에 10단계로 분류된 일반 교육 다종 기술 고등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 POS)를 단일한 사회주의적 교육제도 내에 기본적인 학교 모형으로서 도입하였다. 다종 기술 실업학교는 조직적인 면, 행정적인 면에서 단일한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동독 학교제도의 핵심을 형성했으며,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실시되었다. 확대된 일반 교육 다종기술 고등학교(EOS)는 그후 2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게 된다.

EOS 및 고등학교 졸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교육과정의 입학 정원은 구동독 국민경제의 범위내에서 앞으로 몇년간 어떤 능력을 갖춘 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 정해졌다. 입학 허가를 위해서는 학교 성적외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은 또한 직업 교육 시설내에 들어 있는 고등학교 졸업시험반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었다. 80년대 말에 전체적으로 해당 학년의 13.5%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통과, 졸업장을 얻었다. 이에 비해 서독에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한 수는 거의 2배에 달했다.

서독에서는 직업 교육이 “이원적 체계”인 반면, 구동독에서는 직업 교육이 오직 국가의 관할과 계획내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행해졌다. 소위 “직업 상담”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졸업생들은 국민경제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맞추어야 했다”.

대학 부문에서는 1990년 기준으로 총 54개 종합대학(Universität)과 단과대학(Hochschule)에 13만명의 학생이 있었다. 입학 허가의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거나(일반 대학 입학 자격) 전문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경우(전공에 관련된 대학 입학 자격)이다.

전문학교(Fachschule)는 구동독의 교육제도에 있어 하나의 특수한 현상이다. 많은 수련생들의 경우 직업 교육을 완료한 상태라야만 전문 학교에 다니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 학교는 고도의 직업 훈련을 제공했는데, 이는 전문대학 졸업정도에 비교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2. 통일 과정 진행시의 상황 및 긴급 조치

구동독의 경계선이 개방되면서 전체 교육 영역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원과 전망이 나타났다. 교육정책은 양 독일국가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접근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중앙집권적으로 형성된 교육 체제를 교육 기회의 균등, 교육 및 직업 훈련 질의 균등, 교육과정의 교환가능성,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 과정 수료의 보장등을 갖춘 자유롭고, 연방적이며, 다원주의적이며, 세분화된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모든 교육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일이 필요했다. 이 첫번째 단계에서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구동독의 사회적, 경제적인 복구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 교육 및 평생교육 (Weiterbildung)¹⁾의 매력과 현대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구동독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합법화된 정부가 선출된 이후 연방과 주 정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0년 5월 16일 서독과 동독의 “공동 교육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동 위원회는 1990년 9월 일반 초중고교육, 직업 교육, 대학교육과 평생 교육에 대한 추천 사항들을 의결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교육제도의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갔다.

1990년 5월 10일 구동독의 대학입학권리 (구동독에서 학문적인 대학 공부를 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도기동안)를 인정하기 위한 문교 장관 회의(KMK)의 결의가 있었는데, 이로써 양 독일 국가간에 새로운 거주이전의 자유가 촉진되었다. 이로써 구동독내의 대학 입학지원자들에게는 통일 전에 이미 서독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되었다.

1) 역주: 평생교육 (또는 재교육)은 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또 받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업보충교육 (Fortbildung)은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직능분야 내에서 받는 교육을 말한다.

이외에도 1990년 10월 1일의 문교장관회의(KMK)는 “구동독 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의 인정을 위한 잠정적인 원칙”을 의결했다. 이는 일정한 교사 그룹에게 있어서는 계속 효력을 갖고 있다. 양국 교육제도의 통합 준비를 위해 서독의 주정부들과 문교부처들은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지원을 보냄으로써 많은 기여를 했다. 신연방주 지역 내에 연방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구조의 건설, 학교 행정의 재정비, 학습계획의 개혁 및 이에 상응하는 현지 교사의 재교육과 직업 심화 교육, 그리고 주교육기관들의 연결 작업들은 서독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양 독일 지역간의 협력은 새로운 교수 및 학습 자료의 확충, 교수계획의 발전이나 위임, 그리고 기타 학교 장비의 설치 등에 있어 효과적인 도움이 되었다.

연방 정부는 몇몇 응급 조치 프로그램들을 통해 모든 신연방주들을 지원했다. 적어도 그 시작 단계에서는 개혁이 이루어진 학교 수업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 독일 연방교육성은 우선 신연방주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념적인 색채를 띤 과목들과 선별된 직업 교육 과목들에 대해 6천만 마르크 이상을 들여 약 250만권의 교과서를 1990/91년도 학년초에 제공하였다. 1990/91년 겨울학기에 대학에는 전체 1,500만 마르크 상당의 교과서가 구비되었다. 1991년 초 19개 대학 도서관은 총 싯가 320만 마르크의 컴퓨터 시설을 갖추었으며, 이는 서독 지역의 도서관과 연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신연방주 지역에 소재한 직업 학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방교육성은 1991년 상반기까지 약 2,800만 마르크를 제공, 컴퓨터, 복사기 그리고 현대적인 교수 및 학습자료의 구매를 지원했다.

구동독 청소년들의 직업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훈련생들을 위해 3억 1,200만 마르크의 재원을 제공, 3만개의 직업 훈련자리(견습일자리: Ausbildungsplatz)를 마련했다. 이 조치와 여타 긴급 조치를 통해 이미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동독 교육제도의 개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있었다. 또한 견습 일자리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신연방주들은 전일제 직업 학교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일조약 제37조는 동서독간의 다양한 교육 체제를 평준화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구동독에서 취득한 초중고등학교, 직업 학교 그리고 대학에서의 졸업이나 자격증의 유효성 및 인정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학교 제도의 재편을 위해 통일조약은 신연방주들이 “함부르크 협약”과 문교 장관 회의(KMK)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법, 연방 직업훈련 촉진법률, 방송 수업 보호법, 대학 개관법 및 대학 건설 촉진법 등과 같은 중요한 연방 법률들이 신연방주에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중 일부는 과도기 규정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제도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많은 이들이 희망해 온 자유 이주권과 교환가능성, 그리고 직업상의 유동성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었고, 이로써 균등한 생활상태의 창출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같은 조치들은 독일 통일이 완성되고 구동독 지역에 있는 주들의 재정 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연방과 주정부, 혹은 주정부들과 주정부들간에 존속해 온 교육정책적, 연구정책적 협력망, 예를 들면 교육 설계 및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정부 위원회(BLK), 학술 자문 위원회 및 문교 장관 회의(KMK)등에 편입되었다. 1990년 12월 중순경 신연방주들이 연방-주정부 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전독일 지역에 걸쳐 공동의 교육 설계 및 시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 12월 초에 신연방주들은 전독일 지역에 공동의 균등한 기본 교육제도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문교 장관 회의(KMK)에도 가입했다.

3. 신연방주 초중고교 제도의 발전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신연방주들은 그들의 학교 제도(Nr.201 그림 참조)를 1991년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했다. 교육 부문에 있어 새로운 각주의 법규들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새로 선출된 구동독 내각이 과거 사회주의 통일당(SED)법을 대체하기 위해 과도기법으로 마련한 구동독법이 적용되었다(예를 들어 잠정적인 학교 규정, 교사직 훈련에 대한 규정).

국가가 통일되고 신연방주들이 형성된 이후 각 주의회는 1991년까지 학교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독자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제도내에 균등한 기본 구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함부르크 협약”(예를 들어 의무 교육 기간, 다양한 학교 종류들에 대한 명칭 및 조직, 학교 종류간의 교환가능성, 증명서와 교사 자격 시험의 인정)과 문교 장관 회의(KMK)의 기타 관련 합의들은 각주의 학교 제도를 재정비하는데 공동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사회주의적 단일 학제 시스템을 여러 종류의 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 무엇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은 가운데 - 커다란 문제들을 수반하기도 했지만, 1991년 여름까지는 모든 신연방주에 새로운 학교법들이 마련되었다. 물론 이 중에 과도기적인 것도 있다. 이 법률들은 교육 내용과 교육 목표의 근본적인 입장에 있어 서독의 법규들과 일치한다. 기본법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가치 질서를 기초로 동 법규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했다:

- 각 개인의 재능과 소질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교육과정과 교육 수료의 다양화
- 교육내용의 개혁(민주적 가치와 행동 양식, 여러 전문 분야를 갖추고

유럽식을 지향하는 일반 교양의 전달)

- 학교행정의 분권화, 교사, 학생 및 학부모간의 공동 논의권의 강화
- 자유로운 운영 주체에 의한 학교 설립을 위한 법률적 여건의 조성
- 종교 수업 및 윤리 수업의 도입

신연방주들은 “함부르크 협약”에 부합하는 취학 의무의 개시를 규정했다. 일반인 의무 교육 기간은 브란덴부르크주를 제외하고는 9년으로 확정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의무 교육 기간은 10년이며, 대체로 3년 연한의 직업 학교 의무가 파트 타임 형태로 연결된다.

학교 구조와 학교 종류에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이 정해졌는데, 이중 일부는 서독의 것과 차이가 난다. 국민 학교, 일반 중등학교(Hauptschule), 김나지움(인문계 고등학교), 종합 고등 학교(Gesamtschule)외에 새로운 학교 종류로 “일반 학교(Regelschule)”(튀링겐), “중학교(Mittelschule)”(작센) 혹은 “중등 학교(Sekundärschule)”(작센-안할트)가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중등 부문(Sekundärbereich) I 단계”가 일반 중등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Realschule) 및 김나지움의 3가지 조직으로 정해진 반면,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겐주에서는 학교 종류를 김나지움과 종합 학교, 실업 학교의 교육과정이 조직적으로 종합된 또 다른 학교 종류도 있다. 중등 부문(Sekundärbereich) I이 끝나고 연계 되는 자격은 서독에서와 같다.

신연방주들의 학교법에 따르면 중등 부문(Sekundärbereich) II 단계의 학교 종류는 전반적으로 서독의 그것과 일치한다. “중등부문 II 단계”는 한편으로는 김나지움의 상급 단계,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적인 학교 종류들을 포괄한다. 모든 신연방주에는 직업 학교, 직업 전문학교, 전문학교, 전문 상급 학교가 세워질 것이고, 특히 작센-안할트와 튀링겐주에는 직업 고등학교도 설립될 것이라고 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

겐주에는 학교법상 직업적인 김나지움(11학년-13학년)과 전문 김나지움이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4개주의 학교법들은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포함한 8년간의 김나지움 교육 과정과, 13학년이 아닌 12학년 후에 일반 대학 입학 자격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해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13년간의 학업 기간을 설정).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통과하기까지 꼭 필요한 수업 기간은 현재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신연방주들에서 12년간의 수학후에 획득이 가능한 고등학교 졸업 증서의 효력은 우선은 문교 장관 회의의 의결에 따라 1996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인정된다. 1993년 3월 25일 주수상들은 문교 장관 회의(KMK)에 1994년까지 확실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위임했다. 모든 관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증서의 질이 떨어지는 안 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학교 제도의 재편에 있어 교사들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률과 규정들을 통해 신연방주들은 교사 양성을 변화된 학교 체제에 맞추고 서독의 학교 교육 규정에 맞는 교사직을 설립해야 한다. 교사 양성 교육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두가지 위상으로 구조화되었고, 원칙적으로는 대학에서의 수업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의 의무적인 막스-레닌주의의 기본 학습과 필수적이었던 러시아어 및 스포츠수업은 1990년 가을 학기부터 없어졌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들의 법에 따른 교사 자격 시험의 상호 인정”에 관한 1992년 6월 26일의 문교 장관 회의(KMK)의 합의는 교사 양성 교육의 개혁을 고려한 것이다. 교사의 재교육 및 보충교육²⁾은 다양하고 새로운 수업 내용 및 방식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서독 주들은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 역주: 여기서 교사 재교육 (Weiterbildung)은 통독후 구동독 교사들 (특히, 정치·사회 과목 교사)을 대상으로 2-3년간 실시하는 자유 민주정치, 법률, 시장경제 등에 관한 정치교육 과정으로 이를 수료해야만 교사 자격이 계속 인정됨. 보충교육은 교사 자격을 인정 받은 후에 받는 전문적이고 실무 위주의 교사 연수(Teacher Training) 과정임.

1993년 5월의 교육 장관 회의(KMK)는 “구동독의 교사 양성 과정의 인정과 관례적인 경력에로의 포함”에 관해 의결했는데, 이는 신연방주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봉급면에서 통상적인 교사과정을 거치서 교사직을 획득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의 교사 자격 시험이 새로운 법에 의해 시행된 경우에는 1992년 6월의 문교 장관 회의(KMK)의 의결 사항이 상호간 인정된다.

4. 직업상담

구동독에서 직업 상담은 교육성의 업무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는 광역 단체나 지방 자치체의 협의회, 일반 교육 담당 학교, 전문 대학 및 일반 대학, 기업체들에 있어 전체 사회적인 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구동독 직업 상담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224개의 직업 상담 센터였다.

사회주의적인 직업 상담은 발달한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계급 구조 및 사회 구조를 형성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6학년부터 실시되는 이른바 “오리엔테이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 희망과 견습 일자리를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회적 노동능력의 적절한 재생산”이라는 목표를 추구했다. 10학년 학생들중 그 해 6월 15일까지 아직 견습 일자리를 찾지 못한 10학년의 학생들은 아직 마감되지 않은 견습 직장 중 하나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1990년 중반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자유로운 직업 상담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교육제도 및 직업 훈련제도의 포괄적인 재편과 급속히 진행된 근본적인 경제적 구조 변혁 과정이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특별히 정보 및 상담의 수요를 높였기 때문이다.

새로 설립된 신연방주내 38개 노동관청에는 고용촉진법(AFG)을 기초로 하나의 직업 상담 부서가 설치되었다. 고용촉진법(AFG)에 따르면 직업 상담소는 상담을 원하는 사람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가운데 자유롭고 의식적인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도우며 또한 노동시장의 현재 상태와 발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곳을 의미한다. 개인적 직업 상담은 직업 설명과 정보 제공, 직업 훈련의 중개, 직업 훈련 장려 서비스의 보장등에 의해 보충된다. 신연방주 지역의 특별한 상담 수요들의 경우는 연방 노동청의 노동 및 직업연구소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발달된 직업 정보 자료들을 통해 해결하였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업무 지원, 인력 교육, 인력 파견등을 통해 이미 통일의 첫해에 많은 양의 정보 제공 및 상담 활동이 이루어졌다: 직업설명회 일환으로 이루어진 35,567개의 학교 상담, 7,354개의 학부모 강좌와 6,904개의 강연. 28만 2,700명의 상담요청자들에 대해 거의 58만 6천번의 상담 대화와 7,400번의 그룹 상담이 이루어졌다.

1991/92 직업 상담의 해에는 학교 상담 및 상담 대화의 수가 심지어 늘어났다. 직업 선택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노동관청내에 자기 정보를 위한 직업 정보 센터(BIZ)를 확충하는 작업이 진척을 보았다. 1993년 중반에는 이미 18개 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9개의 이동 직업 정보 센터가 1991년 8월 이래 비록 한시적인 것이기는 하였지만 신연방주 전역에 설치되었다. 1991년 중반 총 1,800명 규모의 신연방주 지역 직업 상담 업무 인력을 확충하는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 이중 965명은 상담 제공 및 중개 전문 인력이었다.

직업 상담의 중요한 과제는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 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1990/91년에는 14만 5,693명의 지원자가, 1991/92년에는 대략 13만 8,300명의 지원자가 상담을 받았다. 직업훈련자리를 확보하여 이를 중개하기 위해 직업 상담 부서에서는 1990/91년에는 57,900건, 1991/92년에는 71,300건의 업체 방문을 실시했다.

업체에서 통보된 직업 훈련 자리들은 1991/92년 및 1992/93년 직업훈련의 해의 경우 모든 지원자들에게 분배하기에 그 수가 충분치 않았다. 이에 따라 직업 상담 부서는 기업이외의 시설물에 대규모의 직업 훈련 자리들을 세웠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 구동독 고용촉진법(AFG) 40c조 4항의 특수 규정을 따르거나 혹은 학습에 장애를 받는 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데 결함이 있는 자들(AFG 40c)의 직업 훈련 장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1990/91년 상담의 해에는 1991년 9월까지 38,035명 그리고 1991/92년 상담의 해에는 1992년 9월까지 20,244명의 지원자가 AFG촉진에 따라 기업이외의 직업 훈련 자리에 연결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1991년과 1992년에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직업 훈련 자리가 제공될 수 있었다. 9월말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직업 훈련 자리가 직업 훈련 자리를 연결받지 못한 지원자의 수보다 더 많이 등록되었다. 이런 좋은 성과를 거둔데는 청소년들의 융통성 있는 태도, 기업과의 집중적인 접촉, 그리고 직업 상담 기관의 중개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5. 직업 교육

구동독의 직업 교육은 한편으로는 기업 내부에서의 직업 훈련이라는 특성을 가진 독일적 직업 훈련의 전통을 따랐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획 경제와 기업의 국유화로 사회주의적 사회 질서에 의한 제한을 받았다. 서독의 이원적 직업 교육 시스템 (duales System)은 다양한 교육 장소(기업/직업 학교)를 제공함은 물론, 연방국가의 체제내에서 직업 교육의 다양한 법적 귀속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주 관할하의 직업 학교, 기업의 직업훈련을 위한 연방의 경쟁적인 입법 권한), 구동독의 이원성은 근본적으로 이론적, 실제적 교육의 연결에만 제한되었다. 견습생의 거의 70%는 이론과 실습 장소가 동일했다. 이는 이론적 수업이 기업체가 운영하는 직업 학교 기관들에 의해 기업내에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직업 학교의 1/4(거의 소기업이나 수

공업 부문의 견습생들)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었다. 기업체가 운영하는 직업 학교는 기업의 지도부에 종속되었고, 이론 수업을 담당한 직업 학교 교사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았다.

직업 훈련 작업장에서의 실습 수업은 기업체에서 고용한 전문 기술 교육자, 훈련 전문가 그리고 엔지니어 교육자들이 담당했다. 실제적인 직업 훈련과 이론적인 직업 훈련을 통합하는 작업은 기속력있는 교수 계획이나 두 부분의 직업 훈련을 포괄하는 직업 훈련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

직업교육에 관한 교육학적인 감독은 89년 대변혁시까지 “직업교육을 위한 국가서기국”에서 담당했다. 한편 직업 교육의 계획, 관리 및 시행은 각 경제분야의 내각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콤비나트의 지도를 받았다. 직업훈련생들의 약 42%는 공업 훈련 분야에서, 16%는 건설 부문에서, 11%는 산림 및 농업 부문에서, 나머지는 상업, 수공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직업 훈련을 받았다.

238개의 “전문가 직업”이 있었는데, 이중 98개는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이른바 기초 직업으로 이는 몇몇 전문분야에 펼쳐져 있었다. 이보다 낮은 직업 훈련 수준을 요구하는 62개의 직업은 성적이 미진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5.1. 법적인 기초의 재구축, 지원 조치

통일조약 및 과도기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한 1990년 10월 3일 이후에는 서독에서와 같은 동일한 법적, 내용적 규정들이 신연방주의 이원적 직업 훈련 교육에 적용되고 있다. 직업 훈련법 및 수공업법규에 관한 발효법들은 폐지되었다.

연방 정부는 직업 훈련 기업체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직업 교육의 전환문제들을 안고 있어 직업 기본교육 연도 (Berufsgrundbildungsjahr)를 기속력있게 산입시킬 경우 심한 부담을 겪지 않을까 우려했

기 때문에, 직업 기본교육 연도 - 산업규정은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추측컨데 산업은 기업의 직업 훈련 자리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의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직업교육 촉진법(BerBiFG)은 5개 신연방주를 공식적으로 연방 직업훈련 연구소(BIBB)의 작업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직업훈련 문제에 있어서 연방 정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 연구소는 사회단체, 연방, 주정부의 대표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연방주의 관계자들도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5.1.1. 교육 훈련 대상 직업의 구조

직업교육법과 수공업규정의 효력 발생과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구동독 전문기술자 교육훈련 대상 직업들이 폐지되었다. 이원적 직업 훈련의 범주 내에 있는 직업 훈련은 이후부터는 다만 직업교육법을 및 수공업규정에 따라 인정된 교육훈련 대상 직업내에서만 종결되어야만 하는데, 이미 착수된 직업 훈련은 구법률에 의해 종결될 수 있었다.

이같은 전환작업은 많은 경우에 커다란 문제없이 이뤄졌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동독 전문기술자 직업과 승인된 교육훈련 대상 직업 사이에 충분한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몇몇 소수의 경우에는 구동독 직업을 일단은 한시적으로 독일 전체 지역에서 인정하는 직업교육 대상 직업으로서 그대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의 직업 훈련 가능성이 보존될 수 있었고 이같은 자격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어떤 직업교육 대상 직업은 지역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철도원이나 건축장비감독 및 나무장난감 기술 제조 같은 직업들이 그것이다.

또 다른 경우로, 특정한 구동독-직업들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예를

들어 예술도자기 화가나 도자기 제조인) 인정된 직업교육 대상직업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문제가 있다. 구동독의 어떤 직업들이 장차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독일 전역에서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사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5.1.2.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자격 부여시스템을 시장경제적으로 구축하는 작업외에도 충분한 수의 직업 훈련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처음부터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기업체의 직업 훈련 자리의 형성을 고려하고 서독의 자격 부여시스템을 전환시키는데 생겨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1991년 정부예산에는 통일 조약 제28조를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는데, 이 조치들에는 마이스터시험 교과과정 및 기업창업 교과과정에 대한 연수 지원,상공업 회의소를 통한 비지니스맨 실습회사의 설립 지원 및 상공회의소의 직업 상담가들을 위한 인건비 보조금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1991년에 5,200만 마르크, 1992년에는 7천만 마르크, 1993년에는 2억 9,600만 마르크를 출발자금으로 지원했다. 1991년과 1992년에 또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연방주에서의 직업교육 수용태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및 동기부여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이 캠페인은 1993년에도 실시 중이며, 199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동독부흥” 공동대응책의 일환으로 연방 정부는 1991년 신연방주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1991년중 직업 훈련 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하여 신연방주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직업 훈련 자리 장려조치를 의결했다. 2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의 직업 훈련 자리를 장려하기 위한 연방 교육장관의 특별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조치의 핵심을 이루었다. 노동관청이 실시하는 2억 5천만 마르크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1991년에 체결된 모든 직업 훈련 계약서에 대해 5천 마르크의 일회성 보조금을 보장하였다. 1991년 12월 말까지 거의 3만개의 직업훈련원자리를 지원했다. 이는 신연방주에 중소기업 중심

의 경제구조 및 교육구조를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5.1.3. 여성

구동독 소녀들은 통일을 시점으로 직업선택의 전망이 서독에서보다 더 넓어졌다. 상업, 기술 부문에서는 직업 훈련 자리의 배당분이 높았으므로, 구동독에서는 비교적 많은 여성들이 또한 상업, 기술 부문의 직업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여성의 취업율은 서독에서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중간 지도자 위치에서 자격을 갖춘 여성의 수는 서독지역 보다 더 많았다.

소녀들과 여성들의 직업선택 전망은 현재 좁아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서독의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다. 이원적 체계에서 직업 훈련 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문제들이 생겨난다. 1992년에 기업체 외부에서 고용촉진법(AFG) 40c조 (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견습생의 2/3가 소녀들이었다.

5.1.4. 우수자 장학제도

연방교육성은 직업교육 우수자 장학제도 프로그램을 실시, 일반 교육 및 직업 교육에 대한 동등한 가치성부여와, 또한 그와 함께 이원적 직업훈련교육의 매력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연방교육성은 1991년 여름 처음으로 직업교육법 및 수공업규정(이원적 직업훈련교육)에 따라 직업 훈련(Ausbildung)을 마친 젊은 취업자들을 위해 우수자 장학제도(Begabtenförderung)를 창설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전문 근로자 직장이거나 구동독 전문학교에서 직업 훈련을 수료한 자들은 처음부터 이 제도의 대상자들이 되었다.

이 장학제도는 직업교육 담당부서에 의해 실시되었다. 장학생들은 신청을 통해 특별히 수준높은 직업심화교육의 비용에 대해 3년 이상 매년 3,000 마르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전체 연방지역에 걸쳐 1993년중 약 8,100 명의 장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600만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해당 부서들은 상공업 및 수공업 분야에서의 프로그램에 거의 완벽한 정도로 협력했다. 체제 전환과정과 또 부분적으로는 여러 직업 부문의 경우 수료생 수가 적어 생겨난 어려움을 감안하면 신연방주 지역에서 해당 부서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것이다. 이들의 신청에 근거해서 1993년중 495명의 장학생들에 대해 약 1,500만 마르크를 지원할 수 있었다. 연방교육성은 늘어나는 장학생 수를 지원하기 위해 담당부서들의 인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5.1.5. 장애자 지원 (Benachteiligtenförderung)

과거 구동독에서는 서독이 특히 고용촉진법(AFG) 40c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장애자 지원 제도가 있었다. 성과가 부진한 청소년들을 위한 조치들은 청소년들을 노동 현장으로 통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들은 기업체의 의무나 “고용보장”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신연방주에서도 무엇보다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 이들이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인정된 직업 훈련코스를 마치도록 하는데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직업 훈련 제도의 전환은 장애 청소년들의 직업적인 자격부여에 있어 구조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 특히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당 청소년들의 직장의 직업 훈련 교육이나 혹은 사회교육적인 보호를 포함한 직업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담당할 자발적인 담당기관들이 우선 마련되어야 했다.

교사 및 직업교육 담당자들에게 사회교육적인 방향의 직업 훈련 개념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 사회교육 담당자들은 직업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연방 정부, 연방 노동청 및 주정부들은 1990년 부터 여러 조치들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을 위한 법적, 물질적, 개인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미 1990년 중반에 고용촉진법은 몇몇 과도기 규정들과 더불어 구동독내에 도입되었다. 고용촉진법 제40c조 (2)항에 따르면

장애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자리와 관련한 지원(1991년 약 1,100개, 1992년 약 4,600개 추가) 또는 기업 외부의 시설에서의 직업훈련(1991년 3,200개, 1992년 6,300개 추가)을 통해 인정된 직업수료(Berufsabschluß)를 달성할 수 있었다.

연방교육성은 1991년 부터 교육과정의 안내라는 의미에서 전체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청소년 직업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과, 신연방주 지역의 장애자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인력 및 지방 결정권자들 내지는 전파자³⁾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개념적 조언을 제공하는 조치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연방 노동청은 장애자 지원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특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신연방주 지역 내의 장애자 지원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2년중 이 특별 재교육 세미나에는, 1474명의 직업 훈련교사, 지원 교사 및 사회 교육 담당자들이 참가했다.

5.1.6. 신연방주의 직업학교 (Berufsschule)

신연방주들은 1991년 3월 15일자 직업학교에 관한 문교 장관 회의(KMK)의 합의를 기초로 직업 학교 제도를 학교법률에서 규정하였다. 이로써 신연방주 지역의 직업 학교들은 직업 학교의 교육적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한 수업을 위해서는 인정된 직업훈련용 직업에 대한 문교 장관 회의(KMK)의 교수 계획들이 수업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이른바 “소수 종사 직업(Splitterberuf)”의 부문에서는 신연방주들은 모든 주에 걸쳐 적용되는 직업 학교 수업의 조직에 편입되어 있다. 막대한 재정을 사용함으로써 직업 학교들은 직업학교 학생들이 직업훈련 교육종료를 위한 중앙연방 회의소 시험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역주: 전파자(Multiplikator)란 교육을 받고 이 내용을 다시 전파시키는 사람으로 독일의 경우 주로 교사, 교수 또는 기타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자들을 말함.

구서독의 지원하에 실시되고 있는 적응 및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직업학교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동서독간의 상호 지원 프로그램의 범주안에서 각 주의 크기에 따라 각 주당 1만명의 교사까지 구서독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편입되었다. 학교 행정을 구축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있었다.

연방정부는 “동독부흥” 공동대응책의 범위내에서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들의 자기 책임성에 유념하면서 이들과 행정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협약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들은 특히 학교, 병원, 양로원 등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총 투자금의 형식으로 50억 마르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직업 학교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자치 단체들은 이 재원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했다. 직업 학교의 건립과 설비를 위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보충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간은 직업학교 건립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5.1.7. 기업공동 직업 교육 기관

연방교육성은 소기업의 직업 훈련 구조를 장려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신연방주 지역에 초기업적 직업 교육 기관의 설립을 위한 다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 1단계로 수공업, 소기업 및 건축업의 직업 분야와 경영가적인 자질의 전수에 집중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구서독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1년 1월 1일 이래로 신연방주에서는 9,280개의 작업장, 942개의 교육장 그리고 680개의 기숙사 조성을 위하여 주로 건축, 금속 및 전자부문의 직업 분야에서 42개 프로젝트에 대략 1억 6천만 마르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건설 부문에서는 단계적 직업 훈련인 “건축(Bau)”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격의 작업장을 마련하는 것이 주종이었다. 이는 신연방주의 경제 회복과정에 있어 건설업이 지닌 중심적인 역할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연방교육성은 1992년중 신연방주 지역의 중간 규모 및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직업 훈련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속 및 전자 분야 직업에서의 자격 시험 실시를 개선하기 위한 일회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몇몇 기업들을 선발해 현대적인 기계, 기구 및 제어기술의 모의실험장치 등을 설치해 주는데 약 2,900만 마르크가 사용되었다. 모범기업들의 지역적 분배는 추가적인 초기업적 직업교육을 통해 신연방주 지역의 직업 훈련 상황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위에 언급한 설비들은 중간 시험 및 수료 시험의 준비와 시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연방교육성이 실시하는 기업 공동의 직업훈련 작업장의 지원외에도 연방경제장관은 1990년 신연방주의 수공업, 중소기업, 무역업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의 평생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1990년 이후 이 프로그램에 의해 69개 프로젝트에 2억 4천만 마르크의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연방경제성은 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년전 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업 공동의 직업교육의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1991년 부터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1991년과 1992년에는 전공 단계(직업훈련 제2-4년차)의 교과 과정뿐 아니라 기초 단계(직업훈련 제1년차)의 교과과정에 대해서도 보조가 이루어졌다.

19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61,744명이 참가한 5,923의 교과과정에 대해 약 830만 마르크의 장려금이 신연방주의 조직체들에 제공되었다. 서독 지역에서 이 조치는 같은 기간중 75만 3,721명이 참가한 70,465 교과과정에 대해 약 9,190만 마르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5.1.8. 직업 교육 관련 인력의 학력인정 문제 (직업학교 교사 및 직업교육 담당자)

교사 직업훈련의 구조를 전환하는 작업에는 직업학교 교사훈련의 개혁도 포함되었다. 추가적으로 교사 재교육이라는 포괄적인 조치들이 신연방주의 독자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또는 서독주들이 참여한 가운데, 또는 부분적으로는 대학에서의 학업제공 등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연방교육성은 통일조약의 규정외에도 측면 지원적인 조치들 특히 직업적 재교육 조치들을 통해 직업 교육이 신연방주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활기있게 이루어지도록 배려했다. 이 조치들 가운데 하나는 동독지역 직업교육 인력 자격부여 프로그램(PQO)으로, 이를 위해 1990년-1992년 기간 중 약 5천만 마르크가 소요되었고, 1993년 예산에서는 2,300만 마르크의 재원이 책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기업내의 직업훈련 담당자들, 직업훈련 상담가들 및 평생교육 상담가들의 적응 능력에 도움을 준다. 그들은 직업교육의 전파자로서 전문 근로자들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때 상담을 해주고, 이들이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해야만 한다.

이같은 조치들 외에도 법규들은 직업적 재교육이 신연방주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기업소속 직업훈련가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자격이외에 “직업교육의 근본문제”, “직업훈련의 계획과 시행”, “직업교육에서의 청소년” 그리고 “법규”의 영역에서 직업 교육적, 노동 교육적인 지식을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직업 훈련가 자격규정이 신연방주 지역에 확대, 적용되었다.

유통성있는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구동독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인정되고, 현재 이미 직업교육을 받은 상태이고 앞으로 5년 내에 이것이 유

효한 사람은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전문가 시험을 치르고 이어 직업훈련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직업훈련가 자격 시험을 치루어야만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5.1.9. 경제계 및 직업학교간의 기술전수 및 모델 연구

신연방주 지역에 있어 경제계 소속의 시설들 및 직업학교에서의 직업 교육 실습을 신속히 현대화하고 구서독 수준으로 과감하게 평준화하기 위해 연방교육성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혁신-이전-프로그램(Innovations-Transfer-Programm)”에 3,750만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모델 프로젝트나 서독지역의 다른 혁신적인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들이 신연방주 지역의 직업교육 시설들에 이전될 것이며, 이같은 결과들은 필요한 경우 적용되거나 계속 발전될 것이며, 특히 동서독 교사의 협력적인 공동작업을 통해 직업교육실습으로 전환될 것이다. 각 신연방주는 주단위를 초월하는 이전 프로젝트나 시범계획(주로 경제부문에서)을 통해 또는 각주에 특수한 이전 프로젝트나 시범계획(“직업교육”부문에서)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1993년 3월까지 23개의 이전 프로젝트에 대해 2,400만 마르크의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의 시급한 과제들을 감안할때 이같은 계획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있다.

- 직업 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 새로운 기술
- 경영가 및 기술자 직업 교육시 시장경제적 사고와 직업적인 행동 도입
- 환경보호 부문의 자격 부여
- 직업 교육 및 평생교육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
- 자격을 갖춘 상담/평생교육
- 직업교육 담당자의 자격부여

- 새로운 조직의 구축

5.2. 구동독에서 취득한 직업 자격증의 인정

통일조약 이후 구동독에서 취득한 혹은 국가가 인정한 모든 직업훈련 수료증 및 자격증들은 학교나 대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신연방주에서 계속 유효하다. 실시된 시험이나 자격증들은 구서독에서의 시험과 동일하며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통일조약 제37조 (1)항). 이 원칙은 수료증 및 자격증이 서로 동등하다는 한도내에서 유효하다. 이 동등성의 여부는 각 해당 관청이 신청에 근거하여 확인하게 된다.

한편 통일조약에 따르면 직업교육의 영역에 있어 직업훈련 대상 직업의 체제나 전문가 직업의 체제에 따른 합격증명서, 인정된 직업훈련 대상 직업에서의 도제 시험은 관청의 확인이 없이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다.

1991년 12월 6일자 “수공업 명부에의 등록을 위한 전제로 전통 산업 명장(마이스터)들의 직업훈련 수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1992년 1월 1일 부터는 신청에 의해 구동독의 “민족전통” 명장(기능보유자)들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수공업 명부에 등록될 수 있다.

산업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원하는 “민족 전통”-명장들을 위해 기업가 및 근로자 단체들은 “민족 전통” 명장의 수료를 산업전문가 수료에 포함시키는 목록을 마련했다.

연방 노동청은 연방 직업교육 기관의 협력하에, 동독의 직업훈련 대상직업을 서독의 직업과 비교하는 문서를 간행했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각 관청이 신청에 의해 등가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문교장관 회의는 1993년 5월 구동독의 전문학교 졸업이 서독의 전문학교 및 직업전문학교 졸업과 등가한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5.3 직업 재교육의 장려

독일 통일은 신연방주 지역의 경제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으며, 이는 약 4백만명의 취업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을 보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계획경제로 부터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직업연수의 제도적, 내용적, 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기업체 소속의 직업 연수 기관중 2/3는 이미 해체되었고, 나머지 1/3은 자발적인 운영자들에 의해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었다. 구서독의 많은 직업 연수 담당기관들이 신연방주 지역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연방 노동청은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 노동 시장 정책을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직업 보충교육 및 직업 전환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직업숙달 보조금 포함) 1992년에는 113억 마르크에 달했다. 연방 노동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위한 주요 부담은 물론 기업 스스로가 짊어져야 한다. 현재 많은 경우에 있어 참가자들은, 특히 특수한 방식으로 경제적인 변혁과정을 겪고 있는 주들의 경우, 아직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제구조적 발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때, 자격 구비의 문제가 지식이나 교육 수료를 조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직업 재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수단만으로써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근로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직업 재교육 및 기업 연수는 한편으로는 기능적 및 기능 외적인 자질의 확대에 기여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 과정 중에 자격 취득의 내용과 방법이 직접 근로활동과 연결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현장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이러한 형태는 적합한 기업구조 및 근로조직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연방교육성은 기업체의 이같은 노력들을 자격증 수요 분석을 위한 구상

개발, 수요에 적합한 기업의 직업 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완성, 그리고 다양한 인력 개발 전략을 위한 모델 개발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6. 평생교육(Weiterbildung)

경제질서 및 사회질서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신연방주의 평생교육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양적 및 질적인 차원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와 사회적 시장질서의 새로운 측면들에 친숙하도록 해주며 새로운 개인적인 직업적 전망을 열어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 동시에 각 개인들이 개인적 인생, 교육경력 및 직업경력에 기반을 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새로운 사회에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평생교육 특히 직업부문의 평생교육은 경제적 발전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요소들에는 동서독에서의 평생교육 경험을 포함하는 구상들 및 이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담당자들(Weiterbildern)의 능력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의 노동 시장 상황, 참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질 및 능력 그리고 학습 습관과 기대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이 영역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점진적인 상호간 학습 과정을 계속하고 가장 두드러진 경제적 구조를 고려하는 것은 신연방주의 평생교육이 자신에게 부과된 높은 기대들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 관련자들, 즉 평생교육 담당 중앙협회, 기업주와 근로자 단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평생교육 협력활동(Die Konzertierte Aktion Weiterbildung)”(KAW)은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다원적이며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 체계의 구축을 처음부터 지원해왔다. 그래서 1990년 이래 평생교육에 관한 질문들, 특히 여성들의 교육 문제와 고용문제에 관한 몇차례의 토론이 실시되었다. “평생교육 협력활동”은 “신연방주에서의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를 계속 자신들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자적인 작업팀을 구성하였다. 동시에 신연방주가 보유하고 있는 동구권 국가 관련 언어 능력 및 문화 능력은 예를 들어 그 국가들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6.1. 신연방주의 평생교육 입법

신연방주의 평생교육 입법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튀링겐과 작센-안할트에서는 1992년 중반 이후로 성인 교육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고 있고,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평생교육 법안이 최종 표결 과정에 있다. 작센주는 당분간 평생교육 법률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부터 필수적인 평생교육 구조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지원방침들은 1993년에도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신연방주 중 유일하게 평생교육 법안에 또한 교육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1996년 이전에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나머지 주들에서는 교육 휴가 규정/교육 면제 규정이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은 보류되었다.

6.2. 일반 평생교육 및 문화 평생교육

연방교육성은 신연방주 지역의 일반적, 정치적 및 문화적 평생교육의 구조조정을 처음부터 일련의 다양한 조치들을 가지고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선은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의 프로그램들을 현실화하고 보충하며, 그리고 구동독 시민대학에서 치중했던 일반 평생교육이 다른 담당기관, 특히 민간 담당기관들의 프로그램들로 보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전에는 중앙집권적 평생교육이 이제는 다원적 교육영역으

로 재구성되었다.

시민대학의 자치단체화와 관련한 동독 시민대학에 대한 상담 지원은 동독 시민대학 협회의 연락처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연방교육성은 1993년 말까지 이를 위해 총 95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이 자치화 과정은 그 동안 큰 진척을 보았다.

신연방주의 구조 변화 및 가치 변화는 또한 많은 문화 영역에서 거대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평생교육 수요를 야기시켰다. 연방교육성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750만 마르크를 지원하며 교육 담당 단체(Trägerverbund)가 시행한 신연방주에 대한 문화부문 자질 향상 프로그램은 새로 확충된 문화 행정 부문의 종사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조치, 문화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한 상담제공 및 자질 향상 기회의 제공, 대학에서의 문화교육 자질향상 조치,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관련 협회나 기관의 신축을 위한 융통성있는 프로그램들을 포괄한다. 전체적으로 이같은 조치들은 민주적인 문화 구조의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6.3 평생교육의 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려책

평생교육 부문의 중요한 특징은 그 프로그램과 담당기관들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평생교육 부문은 담당기관들과 프로그램의 다원주의와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다.

국가는 이 부문에서 보조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한다. 즉 국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참가자 위주 그리고 수요 위주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램에 동등한 자격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적 의무는 특별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 그룹들을 위해 있다.

평생교육의 - 특히 고용촉진법(AFG)의 지원을 받는 직업 부문 평생교육

의 - 엄청난 수요는 신연방주 지역에서 한때 평생교육 시장을 왜곡시켜왔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이들의 질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은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평생교육의 새로운 구조와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특히 나타난다.

보충교육조치와 직업전환교육 조치를 위한 질적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들이 고용촉진법에 따라 장려된 조치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노동청은 1991년 8월 21일과 1992년 7월 14일자의 법령 발표시 직업적 보충교육과 전환교육에 있어서 질과 경제성의 보장을 위한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고용촉진법 제34조에 따른 시험에서는 특히 교육 담당기관들의 능력과 진지함, 적절한 참가 조건들의 준수, 경제성과 절약 원칙의 준수 및 교수 능력의 적합성이 재검사되는데, 이 시험은 조치 시작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교육 조치들이 상황에 적합하고 질적인 수준을 갖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노동청 차원의 초지역적인 시험 그룹들이 설립되어 임의 추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고 없이 개별조치들에 대해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1992년에는 총 425개 조치들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었다.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며, 제거될 수 없는 결함들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담당기관과의 협력은 중단된다.

연방교육성에 의한 지원과 더불어 그리고 다양한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얻은 경험들을 기초로 교육 담당기관이 스스로 책임지고 조직화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적인 평가 기준들이 마련되었는데, 여기에는 교육의 수료증명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현재 동서독에는 자발적인 자기 통제에 대한 토대로서 직업 부문 평생교육을 위한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울러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부처, 경제계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연방 교육성의 재원(총 1,500만 마르크)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6개 지

자단체에는 평생교육 상담소들과 데이터 뱅크가 설치되었으며, 투명성 및 정보가능성의 개선을 위한 기존의 경험들을 평생교육 부문에 이전하는데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6.4 시범 계획

나아가 연방교육성은 신연방주에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 다수의 시범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 지역적 차원에서 평생 교육 부문의 새로운 다원적 구조의 확충 지원
- 특별한 대상 그룹(예를 들어 평생교육 담당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지원
- 평생교육의 특별한 주제(예를 들면 환경보호, 시대사 등)를 위한 자료 지원
- 신연방주 주민들의 일상 문제에 대한 특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평생교육 부문에서의 현대적 매체의 이용과 투입 지원

7. 교육 촉진

7.1 연방 교육 촉진법에 따른 교육 촉진

구동독의 지원제도는 1981년 이래로 부모에 의존하지 않는 학업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수요를 채울 수 없는 기본장학금 외에도 많은 보조금들이 보장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성적 장학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성적에 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범적인 정치적 태도에 좌우되었다.

1990년 7월 1일 부터 소득과는 무관한 기본장학금과 소득 의존적인 증가

금이 조합된 형태가 도입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에 연방 독일의 교육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구동독 장학금법을 연방 교육 촉진법(BAföG)에 따른 교육 촉진에 맞게 전환하는 작업은 가입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예외 규정 및 동화 규정을 전제로 하였다.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방 교육 촉진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통일조약은 일종의 과도기 규정을 정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 교육 촉진의 최종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구동독법에 따라 1990년 10월에 지불된 장학금이 보장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에 연방 교육 촉진법이 도입된 후에도 입법자들은 신연방주 지역의 발전에 융통성있게 대응했다. 그래서 1991년 7월 소득 정산시, 단기적으로 신연방주 지역의 변화된 소득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소득정산 현실화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1992년 가을 구서독의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기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다만 이른바 거주 수요의 경우에는 임대료의 차이가 다양해 아직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같은 개선을 통해 동서독간의 생활 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연방 교육 촉진법의 도입은 기존의 조직 구조 및 기술적인 발전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1991년 3월 말까지 교육촉진관청이 자치단체 차원에 216개, 학생회에 15개가 설치되어 제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독일 학생회(Deutsches Studentenwerk)의 지원으로 연방교육성이 실시하고 230만 마르크의 지원을 받는 교육 및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1990년 10월 부터 1992년 말까지 동법의 실행을 위해 새로 설립된 직업 훈련 촉진 담당 관청소속 약 700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 신연방주 지역에서의 연방 교육 촉진법의 도입과 촉진 기관들의 설립 작업은 1991년 중반 근본적으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 이 때까지 약 18만명의 초중고학생과 대학생들이 연방 교육 촉진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 이 중 대학생들에 대

한 지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했는데, 이는 구서독과 비교해 볼 때 거의 3배나 높은 수치였다.

7.2 기업체의 직업 훈련생들을 위한 개인적 지원

기업내에서의 또는 기업 외부에서의 직업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생들(도제들)의 교육 지원 및 주 학교법에 속해 있지 않는 직업준비 교육 조치에 참가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신연방주의 경우 새로 설립된 38개 노동관청의 임무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토대는 고용촉진법(AFG)이다.

교육 훈련생이 미성년으로서 부모의 집을 떠나 거주하거나, 부모집에서 직업 훈련장까지 일정 시간안에 다다를 수 없는 경우 그 훈련생은 직업훈련 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다.

통독 이후 통일조약에 따라 직업 훈련 지원금을 계산하는 데는 우선은 1990년 7월 1일에 구동독의 노동사회부가 구동독의 고용촉진법(AFG)을 기초로 정한 바 있는 수요 금액과 소득세 공제액이 계속 유효했다.

(새로운 신청의 경우) 1992년 7월 1일 및 (기존 신청건의 경우) 1992년 10월 1일자로 연방 노동청 행정위원회는 신연방주 지역의 직업 훈련생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금액을 확정했는데, 이는 기본 수요라는 면에서는 서독 수준에 부응하는 것들이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차이점들은 연방 교육훈련 촉진법(BAföG)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균적으로 낮은 집세를 고려하고 있다. 부모와 배우자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소득세 공제액은 두 단계(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서독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직업교육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도기 단계에서 부모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만 직업 훈련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교육생들의 직업적 이동성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 1992년에 직업교육 지원을 받은 수는 7,500명에 달했다. 아울러 아직은 직업을 갖기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이나 혹은 직업 경험이 없는 젊은 실업자를 위해 학교 밖에서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조치들이 마련되었으며, 1992년중 약 11,900명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했다.

8.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및 교류

구동독의 국제관계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구동독 외교정책의 특수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집중적인 문화 관계, 교육 관계 및 학문 관계의 구축은 당시 유럽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들 및 제 3세계 국가의 일부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특히 소련을 지향하는 교육정치적 외교관계가 상호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게 나타났었다. 여기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고도의 중앙집중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학생 그룹과 훈련생 그룹의 교환 및 해당 교육 연구 기관들의 공동 작업에 관한 일련의 협정들 외에도 대학간 교류 및 학문간 교류가 특히 활발했다.

다국적인 교육 정책적 활동들은 대체로 상호 경제원조 위원회(COMECON)의 범주내에서 공동 작업에 집중했었는데, 물론 동 위원회는 독자적인 교육정책 프로그램이나 해당 기구들에 관한 규정은 갖고 있지 않았다. 동 위원회에서 핵심은 상호간 경험 교환과 정보의 교환에 있었다. 상호 경제원조 위원회 회원국들간에는 1972년 부터 제 2차 수수료와 자격증, 대학졸업증과 학위의 상호 인정에 관한 다자간 협약이 있었다.

문화 부문과 교육 부문에 있어 사회주의적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교류는 유네스코에서의 공동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해당 부처의 차원에만 제한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성과만을 가져다 주었다.

구동독이 보장했던 제 3세계 국가에 대한 교육 원조는 구동독의 개발 정

책과 외교정치적인 고려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교육 시설의 확충에 대한 원조나 상담자들과 교사들의 파송 또는 교수 재료의 개발과 양도 이외에도 구동독의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시설들에 있는 전문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 전문 학교교육의 범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당 부처간에 체결된 연구협력에 대한 중앙집권적 조치 계획 및 주제 목록이 중단됨에 따라 이제 신연방주에 있는 대학들은 자기 책임하에 그리고 기존의 독일 연방의 중개 조직들의 지원을 받아 대외 관계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는 특히 동유럽에 대해 존속하는 협력 관계를 새롭게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1991년 이래로 대학들에는 생산력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계속해서 상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전통적인 접촉들을 또한 미래에도 속행하도록 하기 위한 형식적인 여건들은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각 대학인력의 개혁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일반적 개혁 과정은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에 대한 개혁도 수반할 것이다.

8.1 교류촉진과 국제 협력에 대한 신연방주의 참여

독일 통일 직후 독일 학술 교류처(DAAD)는 유학과 학자 교환에 대한 기존의 구동독-지원프로그램을 넘겨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는 구동독 정부가 시행해 왔으며 시행중인 모든 교환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을 행정적인 면에서 계속 속행하는데 있다.

연방 정부는 95개국에서 유학 온 약 6,500명의 외국 장학생들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약 1,200명의 구동독 학생들 중 누구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개발도상국에 활동중인 100여명이 넘는 구동독 학자들의 활동도 계속 지원을 받았다.

연방 정부는 각 개인의 사회적 안정 보장과 정치적 신뢰 형성을 위한 이 같은 조치들을 위하여 14개의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의 범주내에서 많

은 재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기존의 건설적인 대학간 국제 교류를 보존하고 새로운 국제교류의 문을 여는데 기여했다. 이 외에도 1991년 이후 신연방주를 독일 연방과 해당 중개조직들의 모든 교환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는 직업교육 분야뿐 아니라 대학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통일조약이 효력을 갖게된 직후 신연방주들은 문화 협정 및 특별한 쌍무 협정에 기초하여 특정한 교육제도 분야를 위해 일하는 전문위원회에 편입되었다. 상호협정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직업훈련생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신연방주의 청소년과 성인들은 1991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했다.

동시에 직업교육의 범주에서 외국체류 가능성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이 강화되었으며, 외국에서 적합한 파트너를 구할 경우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연방 정부는 이로써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들과 새로 설립된 전문대학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 즉 연방정부는 대학의 분위기와 학계의 분위기를 개혁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주단위를 초월하는 대학 교류의 유지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8.2 유럽 공동체의 각종 대책

통일과 더불어 신연방주는 유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의 교육 시설들은 이제 공동체의 교육정책적 공동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들은 행동 프로그램(Aktionsprogramme)에 참여를 통해 신속하게 유럽 차원의 공동 작업에 참여하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서방에 대해 자신의 교육제도를 40년간이나 폐쇄하고 일방적으로 구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를 실시한 결과, 구동독의 교육제도는 통상적인 범주를 능가하는 조치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EU-위원회와 독일은 특히 외국어 교육을 개선하고 이동성과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들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 교육정책적 공동 작업에 신연방주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유럽 공동체(EU)는 총 10만 ECU(약 2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시행중인 EU-프로그램들(ERASMUS, COMETT, LINGUA, PETRA, EUROTECNET, FORCE, ARION)을 위해 재원을 확충하는 작업외에도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들에 역점이 주어졌다:

- 신연방주 소재 학교들에 공동체 회원국에서 온 외국어 보조원의 파송
- 전문능력과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 공동체 국가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외국어코스의 시행
- ERASMUS-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동체 회원국에서 온 초빙강사들을 신연방주 소재 대학들에 파송;
- 일반 학교의 학생들의 LINGUA-프로그램에 의한 교류 조치 참여

공동체적인 지원이라는 개념하에 유럽공동체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과 합의하에 공동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신연방주에서 연방 및 주정부가 실시하는 조치들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정하였다. “인간 자본(Humankapitals)의 개척을 위한 조치”의 범위에서 EU-지역기금(EFRE)으로부터 1억 1천만 ECU가 직업훈련원, 보충교육원 및 직업전환교육원의 설립과 확충을 위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유럽 사회기금(약 7,300만 마르크)의 지원금으로 정부와 주정부들간의 협력하에 신연방주의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조치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여성의 직업적 교육 촉진을 위한 EU-네트워크(IRIS)의 일환으로 1992년 중 신연방주 여성들의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IRIS-네트워크에 있는 78개의 독일 프로젝트중

15개가 신연방주 지역의 프로젝트이다.

국제성을 지향하는 교육은 모든 측면에 있어서 경제적 현대화에 대한 중요한 전제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신연방주의 경우에는 교육정책적 협력에의 참여와 주민들의 이동성은 유럽 공동체의 범주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II. 대학과 학문

1. 구동독의 대학 제도

구동독은 54개의 대학을 보유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요구들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 제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들은 특히 양적인 규모, 학문적인 시설물들의 범위, 기술 건축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및 국제적 학문 교류에 관한 것들이었다.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효과적인 대학교육의 조직화, 부분적으로 예술 및 음악 분야에서의 탁월한 교육 기회들, 다양한 평생 교육 제공 및 방송대학 프로그램들, 그리고 장학금, 기숙사 제공과 자녀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자녀 보호 기회등 사회적 여건들을 들 수 있다. 소련의 모범을 따라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상당히 다른 분야로 이전됨에 따라 연구, 교수 및 후계자 양성 등에 있어서 대학들의 성과와 혁신력은 제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지역에 있는 종합 대학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들은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경제적인 목표설정과 더불어 사회체계의 한 구성요소였다. 1980년 사회주의 통일당(SED)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면 대학의 과제는 “과학적인 엘리트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며, 이론과 실습, 교수와 연구가 일치한 학문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진보된 수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학 및 전문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대학의 제안으로 모든 대학의 교수와 강사들을 임명했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대학들은 그 자원의 투입 규모와 관련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에 종속된 재량권만을 가졌다.

교육은 모든 대학에 대해 기속력을 가진 단일한 대학 교육 계획을 기초로 실시되었다. 대학 입학 허가는 중앙에서 관리되었다. 수요가 많은 학과 예를 들어 의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증서에 기록된 평균 성적이 중요한 입학 허가 조건이었으며, 부분적으로는 대학입학 전에 실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었다. 여성들은 그들의 대학 전공 선택 - 소수의 전공학과(예를 들어 의학, 경제학)에 집중된 - 에 있어서 자신이 원치않는 전공과목으로 바뀌는 경우가 남성들보다 더 빈번했다.

대학 진학 준비는 고등학교 상급반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일부는 고등학교에서 일부는 대학에서 제공한 오리엔테이션 강좌가 있었다. 대학의 의무적인 도입 강좌들과 세미나그룹 상담자들에 의한 학업 관리,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직장 알선은 수요계획에 의해 정해진 직업 상담과 진학 상담 체제의 또 다른 요소들이다. 중앙집권적 계획의 범주에서 대학으로부터는 우선적으로 시행 과제와 관리 과제가 기대되어졌다. 학업자와 교수진간의 유리한 관계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과제들은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맑스-레닌주의적 기초 학문”에 있어 의무적인 수강 과목들, 민방위나 군사 훈련에의 참여, 또 부분적으로는 자유독일청년(FDJ) 연구세미나나 수확 작업을 통해 사회체제에 편입되었다.

구동독 대학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공과대학 및 기술대학과 같이 전문화된 대학이 많았던 것이다. 베를린, 작센 및 할레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동독의 대학망은 잘 분포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분배의 단점들은 잘 확충된 방송통신 수업(방송수업등)에 의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1989년을 기준으로 보면 11만 7천명의 대학생이 일반과정(직접수업)에 등록했고, 15,000명이 방송통신 과정 및 야간 과정에 등록했다. 평생 교육 과정은 28,000명, 그리고 예비 대학수업과정 및 대학원 과정은 11,500명이 등록했다. 구서독의 일반적인 통계방식을 따르면 결국 구동독의 대학생수는 13만 1,200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년배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신입생의 비율은 일반 학업과정의 경우만을 두고 보면 12%였고, 평생 교육, 방송통신수업 등을 포함하여 15%를 차지했는데, 이는 통일 이전 서독 수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신입생 및 졸업생중 여성과 남성의 수는 거의 동일했다.

평생 교육(Weiterbildung)은 구동독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동독에서는 학문적인 평생교육 강좌들의 거의 60%가 대학에 의해 제공되었다. 구서독에서는 평생교육 강좌의 공급구조가 다원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으므로 대학이 제공한 평생교육 강좌는 10%에 불과했다.

방송통신 수업은 기본 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대학교육을 받을 자격은 있으나 출석 수업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학생들이 주로 방송통신 수업을 활용했으며, 70년대에 들어서는 방송통신 수업은 계획 목표들을 수정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요구들에 대응하는 과제를 담당했다.

사회적인 여건들은 학생들이 학업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80년대부터는 부모와는 상관없이 학생들은 기본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이미 직장을 다니며 방송통신 수업이나 평생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월급도 받으면서 일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며, 아기를 가진 학생들은 기숙사나 유아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다. 구동독에서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학생의 13%(1991년)로 서독지역보다 두배나 높았다. 또 학생들의 72%(1989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었는데, 물론 많은 수의 방들은 1인용이 아닌 다수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고 거주환경은 형편이 없었다.

학문적 후계자 양성은 박사과정 A (Promotion A)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연구과정 학생, 기한이 정해진 보조원의 성격을 띤 대학교 혹은 기업에서 파견된 관리후보자들이 등록했다. 박사과정 B는 대학교수 자격취득(Habilitation)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아카데미들은 박사과정 부여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1989년에 연구과정 학생(박사과정)의 40%, 박사과정 졸업자의 34%를 여성들이 차지했다. 서독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졸업자의 26%가 여성들이었다. 박사과정 B의 경우에도 구동독은 여성들의 비율이 17%로 서독의 9%보다 높았다.

1989년 구동독 대학들은 총 10만 4천명의 인력을 고용했는데, 그중 학문 분야, 예술 분야의 인력은 39,000명이었다. 대학교수 및 강사의 수는 7,500명으로, 이중 1,000명은 의과대에 종사했다. 이중 여성들의 수는 통일 이전 서독 지역의 수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다. 즉 구동독에서 여성들의 비율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보조원 그룹의 경우 40%였으나, 학문적 조력자의 경우 35%, 상급조교의 경우 17%, 강사의 경우 12%, 그리고 대학교수의 경우는 약 5%에 불과했다.

대학에서는 교수와 연구의 일치라는 원리가 작용했다. 대학들은 인력의 1/4을 연구에 활용했다. 이들이 구동독의 전체 연구 잠재력 및 발전 잠재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이는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65%나 아카데미 또는 다른 연구기관들이 차지하는 비중 24%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배구조는 통일전 서독과 비슷했다.

70년대 이래로 대학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매우 악화되었다. 구동독 건물기준에 따르면 건물의 1/3만이 양호한 상태에 있었으며, 12%는 심한 손상을 보였다. 계산기나 전자정보 처리 장비등 실험장비들은 매우 낡은 상태였고,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유럽 국가에서 통용되는 교수 및 연구의 요구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서방측 도서들은 근본적으로 기술-자연과학 전공

들에만 있었고, 이 경우에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가 허다했다.

2. 대학의 방향 전환

구동독의 대학 부문은 이미 통일이 되기도 전에 많은 개혁안들과 더불어 방향전환을 시작했다. 구동독 마지막 정부는 막스-레닌주의적 교과목들을 중단했고, 해당 시설물들은 폐쇄했으며 보다 보편학문적인 학과들을 개설하였다. 아울러 대학에서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독자적인 발전 구상들이 논의되었다.

1990년 5월 동서독 양국의 공동 교육위원회는 단일한 학문 및 대학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하에 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1990년 7월 동기구의 학술원(Wissenschaftsrat)은 “독일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의 학문 및 연구의 전망”을 의결했다. 1990년 여름 구동독 정부는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하에 대학의 향후 구조를 위한 권고안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통일조약 제38조는 학술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시설들을 보존하면서 학문과 연구에의 필수적인 개혁을 준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통일조약은 대학제도의 재편 작업, 대학 설립 그리고 교육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기초로 학술원은 전체 주를 대상으로 전공학과와 관련한 권고안들을 마련했다.

통일 직후에 주정부와 대학들은 범지역적 학문 지원, 즉 학술원(Wissenschaftsrat), 독일 연구 협회(DFG), 독일 학술교류처(DAAD), 영재 지원, 대학 총장 회의(HRK), 전문대학 총장 회의 및 전체 주에 걸친 공동 작업, 즉 교육계획과 연구촉진을 위한 연방-주정부 위원회(BLK), 문교 장관 회의(KMK) 등에 통합되었다. 신연방주들은 1991년 1월 1일부터 대학 건설 공동과제에 원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각 주들은 통일조약 및 학술원의 권고안들을 기초로 대학 개혁 및 전문대학 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각 주들은 학술원의 권고안을 기초로 대학의 구조와 발전, 특히 인력확충 및 전문대학 선립에 대한 제안들을 검토하는 대학구조위원회 (Hochschulstrukturkommission)를 설치했다.

구조 전환의 결과 대학들과 시설물들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법학,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일부 인문학 분야 및 교직 교육과 같은 학과들은 새로 설립되거나 구조가 바뀌었다. 많은 수의 의과대학과 교육대학들이 종합대학 내에 이미 편입되었거나 편입되는 중이다.

주정부들이 설치한 “명예위원회”와 “인사위원회”들은 대학교수들의 전공 학문 및 개인적인 자질을 심사했고, 통일조약 규정에 따라 등급을 매긴 추천서들을 제출했다. 이 작업들은 현재 완전히 종결되었다.

개인의 변화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어려움들과 불안들은 과도기간 중 종종 대학 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력 수급을 향후 일자리의 수에 조정하는 작업은 1993년 가을에야 완결될 것이며 직업 교섭의 마무리 작업도 자주 지연되고 있어, 동 부문은 1994년에 가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연방주에서는 1991년 7월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대학개혁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1992년 7월 재검토되었고 총 24억 2,700만 마르크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기초로 연방과 신연방주들은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 인력 개혁, 학문 잠재력의 보존, 학문과 연구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그 재원은 1996년까지의 시행 기간 동안 연방과 신연방주들이 75:25의 비율로 각각 조달한다.

대학개혁 프로그램은 특별히 결함이 많은 전공학과와 전공과목들을 안정시키고 새롭게 방향을 주며, 학문적인 후계자들을 국제 학술 교류에 참여시

키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조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통일조약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동독에서 취득하거나 혹은 국가가 인정한 대학 졸업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서 계속 유효하다. 동 조항은 또한 구동독지역이나 서독의 다른 주들에서 취득한 졸업증도 등가(等價)의 것이면 서로 동등한 것이며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졸업증의 등가성을 인정하기 위해 1991년과 1992년의 문교 장관 회의는 그 전제들과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다양한 결정들을 내렸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구동독의 대학졸업증과는 동등한 자격을 갖지 않았던 전문학교 졸업증과 엔지니어학교 졸업증을 어디에 분류해 넣어야 하는가였다. 문교 장관 회의(KMK)의 결정에 따르면 최소한 3년간 해당 분야의 직종에 근무했거나 전문대학과 일치하는 자격을 수여하는 일년간의 추가 직업 훈련을 수료한 경우라면, 전문학교 졸업증과 엔지니어학교 졸업증은 전문대학 졸업증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3. 대학 개혁의 중간 결산

연방 법규 및 주에서 공포한 대학관련 법률과 대학 개혁법률을 기초로 연방적 구조를 갖춘 자치적이고도 자기 책임적인 대학 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은 성공적이었다. 서독에서 오랫동안 그 우수성이 입증된 연구, 교수 및 학문의 자유가 신연방주에서도 확고하게 보장되었다.

신연방주에는 15개 종합대학과 그에 준하는 대학들, 26개 지역에 위치한 21개의 공립 전문대학, 12개 예술대학 및 음악대학, 그리고 1개의 교육대학 등 지역적이고 전문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이 있다. 새로 설립된 라이프찌히 상업 대학, 베를린, 드레스덴 및 라이프찌히의 교회소속 전문대학, 라이프찌히에 있는 AKAD 전문대학 등 민간에서 설립한 대학들과 행정부 소속의 전문대학(무엇보다 라이프찌히에 있는 텔레콤(Telekom)전문대학) 및 이미 결정된 에르푸르트 종합대학 설립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스펙

트럼을 보충하고 있다. 지역적인 불균형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

교수와 학문은 종종 아주 전문화되고 특정한 산업부문을 겨냥한 과목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폭넓은 기초 위에 세워졌고, 이 양자는 그동안 독일 대학체제에서 등가적인 구성요소가 되었다.

통일 이후 대학 신입생의 수는 증가를 보여, 1989년의 32,300명 이던 것이 1990년에는 39,5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92년에는 34,300명으로 그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구동독 지역의 인구구성비로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앞으로는 동서독 지역의 생활 수준이 균등화되어 교육참여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므로 통일 당시 3만명 수준에 이르던 신입생 수가 2000년에는 그 두배에 이를 것이 예상된다.

신연방주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의과대학은 제외)은 앞으로 약 34,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중 약 절반 정도는 과학, 기술 및 기타 정원을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인력은 1990년에 비해 약 14,000자리가 줄어든다. 교수 자리의 수는 앞으로 약 6,400개 수준으로(의과는 제외) 계속 유지될 것이다.

현재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서독 및 외국에서 온 약 1,250명의 학자들이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신연방주 또는 제 3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신연방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로써 서독 및 외국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충 10%이하이며, 대체로 신설학과에 집중되어 있다. 신연방주 지역의 대학 인력의 대부분은 신연방주 출신이다.

전문대학의 설립시 신연방주는 26개 지역에 21개 전문대학의 설립을 권고한 학술원의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전문대학의 설립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략 290명의 창립교수진과 초빙학자들이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된다. 1992/93년 총 15,000명의 학생 중에서 6,000명이 신입생으로 전문대학에 대한 수요가 대단했다. 이 외에도 2,800명의 학생(이 중 신입생이 2,000명)이 행정전문대학에 다닌다.

전문대학 설립시 신연방주들은 독자적인 발전의 기회들을 활용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과제로서 연구와 개발, 직장인에게 전문대 교육의 허용, 종합대학과 전문대학간 협력적인 박사 과정 절차, 산하연구소(An-Instituten)의 설립은 주로 전문대학의 특징에 속하는 것이다. 교과과정에 인문과학의 과목들을 통합시킴으로 전문대학의 전통적인 과목들이 확장된다.

평생교육에 있어서 전문대학은 이미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다. 전문대학은 전문학교 졸업생이 추가 자격을 얻게 해 나중에 전문대학 졸업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수업이 그러한데, 현재 방송통신 수업에 교량코스는 8개 공업 학과와 경영학, 경제 엔지니어 분야에 걸쳐 18개 전문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다.

신연방주들은 현재 69,000명 정원의 전문대학 확충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학술원이 추천한 63,000명의 학생정원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술원이 독일 전체지역에 대해 요구한 바 40%의 정원비는 신연방주 지역에서 이미 달성되었고 작센-안할트와 같은 몇개 신연방주에서는 이를 넘어섰다.

연구 부문에 있어서 장려조치들은 점점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독일 연구 협회(DFG)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신청서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5개의 특수 연구 분야가 신연방주에 이미 설치되었고, 다른 분야들도 준비 중에 있다.

연방교육성과 신연방주들은 일반 연구 지원과 특수 연구분야를 위해

1993년 독일 연구 협회(DFG)에 1억 5,800만 마르크,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학교수 자격취득 지원을 위해 1,100만 마르크 이상의 재원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1억 1,600만 마르크에 이르는 연방연구기술성(BMFT)의 프로젝트 지원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주춤거리던 지원 신청 수요가 1992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후계자 양성 부문은 우선은 대폭 감소가 있었다. 박사과정의 수는 20%(3,400개로), 대학교수 자격취득의 수는 거의 40%(300개)로 줄어들었다. 물론 구서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던 여성 점유 비율은 박사과정의 경우 37%, 교수자격 취득과정의 경우 18%로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신연방주들은 후계자 양성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고, 박사 과정에 장학금을 제공했다. 또한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준비 조치들을 포함한 대학동창회에 대한 지원도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11개의 동창회가 설립되었고, 21개의 동창회가 준비중이다. 상당히 높아진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영재 촉진 작업을 통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다.

평생교육(Weiterbildung) 부문은 통일로 말미암아 그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학교 졸업생을 위한 추가 자격 부여, 체제로 인한 교육 부족의 제거, 직업을 가진 대학졸업생을 위한 자질 유지(예를 들면 경제학과 법학등)가 그것들이다. 또 다른 그룹으로는 최근 3년 동안에 이전의 조건에 맞추어 졸업증을 취득했고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변화된 상황에 맞서 있는 대학졸업생들이다. 연방-주 교육계획 및 연구지원 위원회(BLK)는 한 광역 단체(Kreis)당 약 17만명(교사직 졸업자는 제외)의 인원이 중단기적으로 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통일로 말미암아 방송통신 대학에서도 새로운 요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술원은 1992년의 권고안에서 전독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모델은 무엇보다 모든 방송통신 대학에 있어서 평생교육 가능성의 우선적 확충, 전문대학 부문의 방송통신 수강과목의 설치, 공과 대학의 방송통신 수강과목의 우선적 확충, 그리고 방송통신 수강과목의 직접 출석과목에로의 편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BLK에는 지원 중점 사업으로 대학들의 이니셔티브를 조정하고 계획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방송 통신 수업” 전문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신연방주에 해당 제안들을 실현하는데 3,500만 마르크의 지원이 있게 된다. 신연방주의 대학들은 우선 공학부문에 있어 자신들의 권한을 이러한 방향으로 투입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대학 확충을 위해 1991/92년 대학설립 공동 과제에서는 총 9억 마르크가 소요된 계획에 대해 연방이 50%를 지원했다. 이로써 투자가 계속될 수 있었고, 긴급한 건축 및 정비조치들이 시작되었으며, 대학시설들은 대형기기, 컴퓨터 및 도서들을 신속하게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학술원에서 권고한 계획들이 실행되고 전체적인 구상으로 확정될 경우 재정 수요는 현저하게 늘어날 것이다.

현재 대학생의 거의 2/3가 기숙사 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기숙사 정비 사업을 통해 초과수용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면, 기숙사 공급율은 50%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이다. 기숙사외에는 현재 학생들을 위한 민간주택 시장이 없기때문에, 학생 기숙사의 건축은 특히 중요한 사업이다. 연방 정부는 1991년과 1992년 중 응급조치로 신연방주에 2억 마르크 이상을 지원했다. 또 다른 2억 5천만 마르크의 연방 재원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재정비조치와 신축조치에 투입될 것이다. 주정부의 보충 재원과 대학운영자 투자분을 합할 경우 이 부문에 총 4억 마르크 정도의 투자가 예상된다.

4. 통일 독일의 대학 제도

대학 부문에서의 독일 통일은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연방적인 기본질서를 기초로 신속하고도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신연방주의 대학들은 국제 학술 교류에 편입되었다. 독일 대학풍경은 베를린 소재 훔볼트 대학,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할레-비텐베르그, 예나, 라이프찌히 및 로슈톡 대학들의 유서깊은 시설들을 통해, 또한 공학 부문에서는 프라이부르크의 베르크 아카데미, 드레스덴의 공과대학을 통해 더욱 부요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전문대학 분야와 국제간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 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대학교육의 재정비는 바야흐로 독일 연방공화국 전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 구조는 국제적 분업과 깊이 관련된 현대 산업사회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요구들을 단지 제한적으로만 충족시켜 왔다.

학술원, 대학 총장 회의 및 경제 단체들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며 내용적인 대학 교육 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제시했다. 연방과 각 주들은 현재 연방과 주 최고책임자들 간의 교육정책 최고회의를 준비하면서 이같은 방안의 실행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문과 대학원 과정의 구분, 전문대학의 확충, 대학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대학의 강의와 학습 여건의 변화와 개선 등은 대학 재정비에 중요한 항목들이다.

또한 국제 협력 부문에서도 새로운 요청들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 대학 교육에서 강화된 방향이 우선은 유럽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의 학과 통합과 같은 작업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아울러 중동부 유럽 국가들도 자신들의 학문시설들을 개혁할 때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유럽의 대학에 있어서 독일의 위치는 건설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과 특

히 대학분야에서 통일로부터 얻은 경험을 중동부 유럽의 개혁국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분야의 통합작업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독일의 대학제도를 구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국제적인 학문발전, 특히 유럽의 학문발전에 독일의 대학을 통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연구와 기술

1. 통일 이전의 상황

구동독에서 연구 및 개발 자원은 4가지로 구분되었다. 콤비나트 및 각 부처 소속의 산업 연구(이에 대해서는 제 5장 IV 6을 참조), 아카데미에서의 연구, 종합 대학과 공과 대학에서의 연구(제 6장 II 1 참조), 사회주의 통일당(SED) 중앙위원회 직속의 대규모 사회과학 연구소등이 그것들이다.

대학 이외에서의 연구는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졌다(과학 학회, 농업 과학 학회, 건축 학회 등). 1989년 말 총 3만 6천여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중 14,400명은 연구 및 개발 분야의 학자들이었다. 정치적, 계획경제적 목표 설정과 통제 조치들로 인해 대학 이외의 연구에서는 여러 면에서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적으로는 공공 지원을 받는 연구가 아카데미(학회) 부문에 집중되었고, 지역적으로는 재정과 인력 자원이 베를린과 작센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분야별로는 응용지향적이고 구동독 경제에 중요한 부문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구동독이라는 체제의 정치적 특징들은 연구와 기술의 구조와 작업 방식도 결정했다. 학문적인 경력, 지도적인 위치 및 출판 전략들이 정치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었다. 연구는 국가 과학 기술 계획과 같은 것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계획되었다. 투자 부족이나 불충분한 장비 등의 결함은

연구의 높은 인력 집중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었다. 각 기관에서 연구와 개발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인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구 정책 및 기술 정책에 대한 공적인 통제나 비판은 없었다. 구동독에서의 연구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계속 고립되어 간 반면, 특히 코메콘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협력 관계는 장려되었다. 동서독 양국은 장기간의 난관을 거친 후 (예를 들면 서베를린에서 온 학자들과 연구기관들의 편입 문제등으로) 1987년에 이르러서야 약 60여개의 프로젝트와 더불어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연구 조건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연구 학술위원회의 평가팀은 고에너지 물리, 고체 물리, 분자 생물학, 수학, 지리생태학, 재료 연구, 식품 연구, 식물 연구등에 있어 고도의 연구 성과, 부분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신 과학에서의 개별 프로젝트와 연구 분야들도 수준이 아주 높았음이 증명되었다.

2.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연구 정책

양국간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짧은 기간중 집중적인 과학-기술 협력이 발전했다. 우선 연방연구기술성(BMFT)은 과학자들이 서방의 정보 및 통신, 하이테크 기기와 생산공정등에 쏟았던 기대들에 완전히 부응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다. 전면에 나타난 것은 독자적인 시설들을 확보하자는 욕구였던 반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개방적이고 정치적으로 아무런 의무를 지지 않으며 업적중심의 연구체제에 대해 얻은 확신은 일체감과 변혁에의 의지를 강화시켰다.

연방 연구기술성은 이미 1990년 초여름 단일한 독일의 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이는 합의를 통해 정치와 학문의 조직화

를 낳았고, 후에는 통일조약 제38조로 연결되었다. 통일조약 제38조가 결정됨에 따라 중앙집권적 구동독 연구체제를 해체하고 그 대신 그 우수성이 입증된 서독의 학문 축진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전환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학문적인 연구 담당기관들과 지원기관들의 참여였다. 독일 연구 협회(DFG), 막스-플랑크 협회, 프라우엔 호퍼 협회, 대형 연구기관의 실무단, 산업 연구 동맹의 실무단, 재단들이 이미 일찍부터 협력, 교류, 지원등을 시작했으며, 이 새로운 연구 환경 구상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화폐, 경제 및 사회 통합과 더불어 단일한 독일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이 마련되었다. 동서독의 연구부처 장관들과 대규모 학술 연구기관들이 함께 한 연구정책 최고 회의의 결과들은 이같은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후에 통합 과정에서 연구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통일조약 제38조의 중요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았다:

- 연방적인 구조를 갖춘 신연방주 지역의 연구 환경 조성
- 연구의 자율성, 자치적 성격 보장
- 보조성의 원칙하에 국가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실시
- 국제적인 질적 기준에 따라 경쟁력있는 연구 체제의 구축

통일조약 제38조는 우수한 연구시설들을 보존하면서 학문과 연구 부문의 필수적인 개혁을 위해 학술원과 공공 연구시설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학문과 연구를 독일 연방공화국의 전체적인 연구 구조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학술원에 의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들과 아카데미들은 이미 해산되거나 다른 조직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1991년 12월 말까지 주정부 소속 기관으로 존속해야 했다. 1991년 12월 말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총 9억 4,200만 마르크의 과도기 재원을 마련했다.

독일 기본법 제91b조에 따르면 연방-주-협약들은 연구기관 및 연구 계획

에 대한 지원이 신연방주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조정되거나 새로 체결되어야 했다. 서독에서 그 효력이 입증된 연구 지원 방법과 프로그램들이 전독일 지역에 적용되었고, 신연방주 지역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개별 지원 조치들은 새로 수용되었다.

통일조약의 시행을 위해 연방 연구기술성은 1990년 11월 11일 “통일 독일의 연구 및 개발 전망(신연방주를 위한 8 포인트-프로그램)”을 통일과정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작성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 원칙들은 특히 신연방주 지역에 대한 연방의 지원 분야를 완전 공개하고, 학자들에게 국제 학문 공동체로의 완전한 통로를 마련해주며, 구조 전환 작업을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개별적 연구분야와 기술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조치를 통해 현대적인 기술의 도입과 기술지향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특히 기술 센타와 창업 센타에 대한 지원, 연구 인력 증원 지원, 위탁 연구 및 위탁 개발, 기술중심의 창업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대학의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능력을 대학으로 환원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 재정을 통해 연구 기관들을 설립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파악했다.

3. 통일조약 제38조에 따른 연구·기술 정책의 시행

통일조약 제38조와 더불어 연구소 연구원들의 고용관계가 학술원의 평가가 제출되기까지, 다시 말해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계속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의 연구소의 해체와 더불어 종료되도록 하는 법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공적 지원을 받는 연구에서는 인력면에 있어 특별한 길이 열렸다.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사회적 여파들은 과도기 재정의 지원, 대학 개혁 프로그램의 하나인 학자-통합-프로그램, 그리고 연구 및 기술 부문의 고용 창출 조치 (ABM)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것이 가능했다.

학술원은 그 위촉에 따라 구동독 아카데미의 대학의 연구소들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고 이 연구소들을 새로 구조 전환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200명 이상의 국내, 국외 학자들로 구성된 10개 작업팀이 1990년 가을부터 1991년 여름까지 약 130개에 이르는 아카데미의 연구 기관 및 서비스 시설을 평가했다. 학술원은 설문지, 또는 무엇보다 연구소 방문과 수차례의 작업팀 회의를 거쳐 연구 기관들의 학문적 성과를 사정(査定)하였고, 새로 설립될 연구 기관들의 앞으로의 학문적 목표 설정, 규모, 향후의 인력 및 기계 확충 등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이같은 절차들과 결과들은 처음에는 당혹감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광범위한 인정을 얻었다.

1991년 9월 학술원은 활동을 마감했다. 학술원은 대학 이외의 연구에 있어 약 13,300개의 자리를 새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대학으로의 재반환을 위해 2,000개, 대학 외부의 새로운 연구기관에 대한 제도적 촉진을 위해 11,100개, 그리고 인문학 아카데미 계획내에 50개).

신연방주가 제자리를 잡아 가자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구조 조정(1991년에 특히 이루어짐)과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절차(1992년에 주로 이루어짐)를 확정했으며, 이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술원의 권고들은 완전히 실천에 옮겨질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12월 17/20일에 체결된 1975년 11월 28일자 기본법 제91b조에 따른 공동 연구지원에 관한 연방-주정부간 협정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을 가입시킨다는 내용의 연방 및 주정부들간의 합의, 이에 관한 시행 합의(연구장려 합의)는 근본적으로 이같은 협력을 위한 것이었다. 교육 계획과 연구 장려를 위한 연방-주정부 위원회는 새로운 연구 기관들을 공동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학회 부문에 있어서는 1990년 10월 연방 연구기술성 주도하에 생겨난 KAI AdW(구동독 아카데미 산하 연구소 및 시설물 조정 및 청산 기관)의

활동이 특히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구를 통해 구조 전환상의 어려운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진정될 수 있었다.

수천명의 연구원들에 대한 상담 지원, 이직(離職) 지원, 그리고 과도기 지원; 유리한 조건(공간과 기구들)을 통해 민간경제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평준화 지원; 부동산, 공간, 기구 및 도서관 관리; 새로운 구조를 위한 구상들의 개발; 새로운 연구 기관의 설립 등 KAI(지금은 조정 및 확충 기관)의 사업은 1992년 초 이래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위탁을 받아 계속 진행되었다.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는 대학개혁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자-통합-프로그램(WIP)의 시행이다. 과도기적 성격을 띤 이 기관의 활동은 건축 아카데미의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학술원의 작업을 기초로 또 직접적으로 그들의 권고를 따라 몇달 안에 새로운 연구 기관들이 설립될 수 있었다. 새로운 연구 기관들의 연구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구조를 발전시키며, 학술원에서 추천한 인력 자원 및 자재의 선택 작업을 실행으로 옮기고, 개별 학자들이 그동안 안고 있었던 불이익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위원회(Gründungskomitee)” 내지는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설립 위원회에서의 작업과 병행하여 연방 정부는 신연방주 및 베를린과 더불어 신규 설립을 위한 정관, 법적인 형태, 경제 계획 및 기존 기관들의 부동산과 자재들의 양도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학술원, 교육계획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연방-주정부 위원회, 연방 연구기술성 그리고 주정부들은 상호 모범적인 협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통일조약 제38조에 규정된 대로 구동독 아카데미의 학자들을 신속하게 마련한 인력 선발 절차를 거쳐 새로 설립한 연구 기관내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연방 연구기술성의 제안으로 신연방주의 과학부처 장관들은 1991년 9월 모든 신설 연구기관들에 대해 단일하고 구속력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확정했다:

- 이미 거론한 연구 기관들의 고위급 인력들은 일반적으로 새로 충원되었다. 이전의 연구 기관들에서 일하던 학자들은 적성과 능력이 맞을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었다.
- 계속 진행되는 연구 및 개발 (R & D) 과제들의 경우에는 인력면에서 연속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해당 과제 영역내에서의 연구원들은 단지 내부적으로 통보되었다. 서방의 방법론적 지식이나 경험들의 전달이 중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기관의 학자 중 10%는 서독이나 외국으로부터 데려 올 수 있었다.
- 새 연구 기관의 선발위원회는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특히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며, 아울러 지원자들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만 했다(심한 장애자들, 나이 많은 연구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의 우선적 선발)
- 입사 시험은 통일조약이나 공공 업무에 관한 주의 법규에 의해 실시된다. 시험은 각 주의 책임하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연방 헌법재판소는 1992년 3월 10일의 판결에서 1991년 12월 31일자로 아카데미 직원들의 고용 관계를 종식하는 것은 합헌적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만기일에 예를 들어 모자보호법에 따라 해고될 수 없는 고용 관계만은 예외적이었다.

새로운 연구 환경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일치할 보였다. 대학 및 대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은 인력, 전문 분야, 구조면에서 새롭게 확충하고 대학내 연구와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1991년 7월 11일 연방과 신연방주가 공동으로 내놓은 대학개혁 프로그램(HEP)이다. 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특히 구동독 아카데미 분야의 학자들과 우수한 작업팀을 대학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학자-통합-프로그램).

대학개혁 프로그램은 1992년 7월 9일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정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내용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재정도 늘어났다(총 24억 3천만 마르크, 연방과 신연방주간의 재정 부담 비율은 75:25). 이같은 배경에서 학자-통합-프로그램은 1996년까지 연장되었다. 인프라스트럭처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여건은 투자-특별프로그램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외의 연구 기관들의 건축 조치와 재정비 조치, 자재 구입을 위해 1993년-1996년 기간중 2억 6,660만 마르크를 마련했다. 초빙학자들을 위한 주택 건축등 보다 소규모의 대학 건축 조치들을 위해서는 총 1억 3,300만 마르크 규모의 프로그램이 수용되었다.

4. 결 론

구동독의 연구 부문은 한편으로는 중앙집권적 구조(특히 소련의 모범을 따른 아카데미 체제)에서 연방적 관할권 구조로의 전환, 개방적이고 국제적으로 완전히 통합된 경쟁을 갖춘 다원적 가치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고통스러운 구조 전환 과정에서 이념적인 보호의 청산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은 대학외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학술원이 잘 평가한 모든 잠재적인 면들을 참작하여 새로운 연구 기관들의 설립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연방과 주들은 1992년 1월 1일에 이미 기본법 제91b조를 근거로 학술원이 추천한 바에 따라 100개가 넘는 연구 기관들을 공동 지원을 통해 설립했다(부록 Nr.202 a-e 그림 참조):

- 3개의 새로운 대형 연구 기관 및 기존 대형 연구 기관의 8개 분소 (플라즈마 역학 MPI 지부 포함)
- 청색목록4)에 따른 34개의 새로운 연구소 및 4개 분소 (특히 연방

연구기술, 농림, 경제, 건설 부처들 포함)

- 9개 연구소, 1개 연구소 일부, 그리고 프라우엔호퍼 협회의 12개 연구소
- 2개 막스-플랑크-연구소, 1개 MPI-분소, 28개 연구 그룹, 학술원에서 제안된 7개 MPG 인문과학적 센터를 위한 운영 시설, 또 다른 막스-플랑크-연구소들이 설립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음.
- 60개의 장기계획들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수용

학자-통합-프로그램에서는 총 1,920개의 지원 승인이 있었으며, 고용 계약이 체결되었다.

전체적으로 연방 연구기술성 및 다른 연방부처의 업무 영역에 있는 새로운 연구 기관들, 주 연구 기관들 그리고 학자-통합-프로그램 내에서 총 12,500개의 연구 분야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외에도 구동독 아카데미 부문에서는 약 3,000개의 연구 관련 고용 창출 조치(ABM)자리가 생겨났는데, 연방 연구기술성은 이를 위해 약 3천만 마르크의 보충 재원을 제공했다.

연방이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 기관들은 구조면이나 전문 분야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면모와 독창성을 보여준다. 학술원의 권고에 따라 소규모이면서 주제 중심적인 대형 연구 기관들이 생겨났다. 새로운 블루 리스트 연구기관(BLE)의 수는 통일 전의 서독의 연구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BLE와 대학간의 협력과 마찬가지로 학술원의 권고에 일치한다. 프라우엔호퍼 협회(Fraunhofer Gesellschaft)는 특히 연구와 경제 부문의 접촉점에서 활동하는 연구소들을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연구소들은 연구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 보였으며, 연구원 자리는 1992년 말 이미 90% 이상이 채워져 있었다. 이는 빠

4) 역주 : 청색목록(Blau Liste)이란 1977년 5월 5일 결정된 연방과 주의 공동연구 추진 프로그램으로 9개 분야의 35개 연구기관과 13개 서비스 기관을 포함함.

듯한 시간, 서독 및 외국 학자들의 거주문제와 초빙상의 난관들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정의된 연구 프로그램에 따라 연구한다. 신연방주 지역의 연구소들은 전공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중복 연구들을 피할 수 있었다. 연방의 연구정책은 신연방주들과 더불어 기초 연구부문이든 응용연구 부문이든간에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학술원의 권고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연구소의 구조와 연구라는 면에서는 물론 인력면에서도 중요한 작업이었다. 1992년 7월 1일자로 신설 연구 기관 부문에 있어 교육 계획과 연구 촉진을 위한 연방-주정부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연구소 직원의 90% 이상이 구동독 출신, 즉 대부분이 구동독 아카데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연령 구조는 대체로 과거 구동독의 연구 기관들과 일치한다. 즉 27,8%가 50세 이상이다. 종사자 중 여성들의 비율은 40% 정도이다. 학술원의 추천대로 새 연구 기관 직원의 40%는 고용기간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연구 기관들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획 부서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비율은 평균 40%이며, 다양한 과제 설정에 따라 각 부서의 종사자 비율은 연구소마다 차이가 난다.

(신연방주 지역 경제 부문의 효율적인 연구 인프라스트럭처 및 효율적인 연구 및 개발의 보존과 확충을 목표로하는 조치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 5장 IV 6을 참조).

대학밖에서의 연구는 오늘날 동독 지역의 연구 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잘 조직화된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독일 전체 지역의 연구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보충하며, 풍부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는 그 업적과 더불어 전체 연구와 기술을 위해 전문적인 자극을 주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대학 외에서의 연구는 동독과 서독을 횡단하는 수많은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예를 들면 정보 통신 기술, 정밀 전자, 광전자, 생명 공학, 의학, 환경 연구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신연방주에서의 연구는 오늘날 유럽(EG와 EUREKA)과 전세계적인 프로그램들, 협력 관계와 연합 프로젝트에 편입되어 있다. 이로부터 생겨날 능력과 경험 덕분에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서의 연구를 지원할 경우 새로운 연구 기관들이 효율적인 파트너 기관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7 장 가정·여성·청소년·노인 정책

I. 가정의 실태개선

1. 통일 이전의 상황

동독시절 가정은 국가의 주도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표의 하위에 처해 있었다. 국가의 주도적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표 중 최우선 순위는 여성의 직장생활과 출산을 증가였다. 사실상 가정은 교육을 위한 공동체, 나아가 책임감있는 공동체로서의 독자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에 비해 기본법 (제6조)에는 가정을 독자성을 갖춘 기구로서 보고 있다. 즉 가정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한을 갖고 있다. 가정의 구체적인 형태는 제일차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과제이다.

우리 독일사회의 다원성에 부응하여 각 가정은 그 생활방식과 생활형태를 스스로 결정한다. 가정은 타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정책은 가정에게 행동 공간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 다양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능력을 강화해 준다. 가정은 국민경제적, 인구정책적, 이데올로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기구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독일 통일의 달성 이후 신연방주의 가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꾸밀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책임 역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가정의 이러한 책임을 가볍게 해 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자녀와 가정을 위한 화목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에게 교육, 정보, 자체조직, 자조, 권익대변 등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정정책이 추구하는 과제이다.

2. 가정에 대한 지원

1991년 현재 독일의 가정수는 약 940만이었으며 가정의 미성년 자녀수는 1,530만 명이었다. 그 중 신연방주 가정수는 약 230만 , 미성년 자녀수는 360만 명이었으며, 구서독주의 가정수는 약 710만, 미성년 자녀수는 1,120만 명이었다. 이 중 신연방주의 독신양육자는 21.5%, 구서독주의 독신양육자는 13.8% 였다.

2.1. 경제적 상황

경제적 여건은 일상생활의 요구사항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가정의 능력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친다. 가정이 갖고 있는 생활상태가 다양함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을 경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다양한 가능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가정의 생활수준을 보장함에 있어서 가치분 소득액은 - 자녀가 없는 상태일 때와 비교할 때 -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

가정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즉 부모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감소와 가정의 수요에 따른 급부제공이 그것이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조정 (Familienlastenausgleich)시키는 2중 제도로는 (duales System), 자녀 수에 따른 세금면제액과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녀수당 추가보조금을 포함한 자녀수당을 들 수 있다. 즉 자녀수당과 자녀를 위한 세금면제액은 자라나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일반적인 부담감소 조치이다.

가정에 대한 급부제공의 해당금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한 가정의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독신 양육자, 자녀가 많은 가정, 실직상태에 처한 가정 등, 막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수요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으로 수요에 따른 조정과 다른 한편으로 조세부담능력의 고려는 가정의 부담조정에 있어서 변화하는 가정정책적 요구조건에 신축성을 부여해 준다. 신연방주에 있는 가정의 경우

도 수요에 따른 일반적인 가정부담조정이 생활조건을 평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정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복지와 세금감면조치와 같은 혜택은 신·구서독주 가정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금세기 가정정책적 과제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2.2. 자녀양육비 (Erziehungsgeld)

자녀양육비 지불과 자녀양육휴가를 내용으로 하는 연방 자녀양육비 지급법은 1986년 1월 1일 실시된 이래 대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부모의 약 97% (1991년 현재), 그리고 약 470만 명의 부모 (1992년 현재)가 자녀양육비를 받은 바 있다. 신연방주에서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가 지불되고 있다. 1991년에 신연방주에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87,452명이 처음으로 자녀양육비를 받았다.

2.3. 자녀수당 (Kindergeld)

연방자녀수당 지급법(BKGG)에 의한 자녀수당은 자녀의 일반적이고 고정적인 기본생계수요를 위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 자녀수당은 소득세법의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액과 함께 가정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2중제도의 하나이다. 가정의 부담조정을 통해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과급되도록 한다.

연방 자녀수당 지급법은 196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신연방주에도 적용되고 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첫번째 자녀수당은 매월 50 DM으로부터 70 DM으로 인상되었으며, 두번째 자녀수당은 130 DM, 세번째 자녀수당은 220 DM, 4번째 및 그 다음 자녀수당은 240 DM 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수당은 두번째 자녀부터 70 DM까지, 세번째 자녀부터 140DM 까지 누진적으로 점감된다. 자녀수당은 16세까지의 모든 어린이

들에게 해당되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기타 부담을 안고 있을 경우 27세까지 지급된다 (이에 기본병역 수행기간 및 병역대체 근무수행기간이 추가됨).

2.4. 생계비보조

자녀가 있는 독신 양육자는 1979년 7월 23일자 생계비 보조법(UVG)에 따라 특별지원금으로서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는다.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 법은 그때까지 신연방주에서 적용되던 생계비 보장규정(USVO)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생계비 보조는 자녀가 있는 독신 양육자로서 자녀의 부모 중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생계비를 받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받을 경우, 유용한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자녀일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에 대한 생계비 보조 청구권은, 주(州)에게 위임된다.

1993년 1월 1일부터 청구권이 있는 자녀의 최고 연령은 11세이며 생계비 지급기간은 72개월 간이다. 생계비 보조는 법률로 정해 놓은 일반 수요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일반수요기준은 아직 신·구서독주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단계적으로 평준화되고 있다. 구서독주에 있는 6세 미만 자녀의 최고지급액은 매월 291 DM, 6세 이상 12세 미만의 경우 매월 353 DM 이다. 신연방주의 경우 각각 219 DM 및 264 DM 이다.

2.5. 지원기금 및 연방재단

통일조약 제31조 제4항에 따라 1990년 10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곤경에 처한 임신부를 위한 지원기금”이 긴급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임신부와 그 가족의 자녀와 관련한 결단이 용이하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억 3,000만 DM을 마련해 놓았다.

29,000명 이상이나 되는 여성이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약 23,600명은 유아

용 첫번째 준비, 애기 돌보기 등을 위해,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여성들은 자녀를 기르기에 적당한 주택수리비로서 재정지원을 받았다.

1993년부터 “어머니와 자녀 - 태아 보호”라는 연방재단이 가입지역인 신연방주에도 이전되어 다른 방법의 사회보장금이 없거나 적시에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신상담의 일환으로 육아용 첫번째 준비, 애기 돌보기 등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6. 동독이 지급하던 지원금의 정리

구동독시절 젊은 부부들은 주택마련과 가구마련을 위한 저리용자를 받았다. 부부를 위한 결혼 용자금은 자녀가 1명 출생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었다.

통일조약을 통해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에 대한 가정지원제도가 재편되었다. 새로운 지원조치가 도입되었는가 하면 결혼 용자금과 같은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결혼 용자금의 상환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자녀가 출생할 경우 면제되었다. 결혼용자금의 이자는 정확한 납기일에 불입되어야 할 경우, 연방예산으로부터 지불되도록 하여 계속 무이자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정부는 1992년 총 8,000만 DM을 지원한 바 있다. 그 중 약 7,200만 DM은 이자지불, 그리고 약 800만 DM은 용자금의 상환면제에 활용되었다.

구동독의 생계비 보장규정은 1992년 1월 1일을 기해 생계비 선불지급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연방전역에 걸친 생계비 선불법의 법적 통일이 달성되었다. 특히 연령한계와 같은 상이한 규정을 배려하면서 1년 동안 과도기 규정이 적용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연방주에서 출생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통일조약에 따라 구동독의 산모에 대한 지원조치가 계속 보장되었다. 그와 같은 지원조치로는 1,000 DM의 출산보조금(Geburtenbeihilfe)과 출산후 20주

간 (쌍둥이 이상일 경우 22주간) 최종 실봉급의 약 70%에 해당하는 출산수당 등이었다. 이러한 지원조치는 이미 1991년 전반기에 정지되었다. 구동독이 산모에게 제공하던 세번째 지원조치였던 산모지원 조치는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자녀수, 결혼여부, 탁아소의 혜택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즉 지급기간은 12개월로부터 18개월 내지 24개월 또는 36개월까지이다 (탁아소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36개월간 지급됨). 이러한 지원을 위해 1991년에 6억 6,700만 DM, 1992년에 1억 6,700만 DM이 소요되었다.

3. 가정지원사업의 촉진

중앙집권적 국가였던 동독에서는 가정의 독자적 책임감이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만 있을 뿐이었다. 가정지원사업과 가정의 권익을 지원할만한 구조가 신연방주에는 없었다. 따라서 가정을 보호한다는 기본법의 관련조항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 지원 이외에 관계기관의 구축이 시급했다.

3.1. 가정지원단체의 구축

연방차원의 4대 가정지원단체 (독일가정지원단, 신교 가정문제 해결공동체, 독일 카톨릭 가정지원단, 독신부모협회)의 구축을 통해, 그리고 방대하게 조직된 이익단체들의 가정지원을 통해, 가정정책이 어디까지나 가정의 독자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축되지만 가정의 이익단체를 통해 지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초기 지원”(Anschubfinanzierung)을 위해 총 237만 DM을 마련해 놓았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방가정지원단체들의 지부는 당분간 연락본부 및 상담본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3.2. 임신 상담망의 구축

임신여성의 복잡한 사정을 해결하고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개인적 지원, 사회복지지원 등을 개선한다는 통일조약 제31조 제4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광범위한 임신 상담망을 구축해 놓았다. 1992년 말까지 지원대상 임신상담소는 234개소였으며 그 중 186개는 자율단체에 의해, 그리고 48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었다. 연방정부는 1990년 10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임신상담소의 설치비, 인건비, 물건비의 90%인 2,500만 DM을 선불해 주었다.

3.3. 가정상담 및 가정교육 지원

통일조약 제31조 제4항에 따라 가정지원 사업을 확충하고, 그리고 다원적 가정지원활동과 가정교육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단체 책임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2회의 전문 학술대회 그리고 부부상담, 가정상담, 인생상담, 교육상담 등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35개의 교육 세미나와 연수 세미나가 지원되었다. 나아가 전문기관과 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170만 DM이 지원되었다 (예: “가정적 변화에 처한 교육상담”, “별거 및 이혼상담”, “중재”, “상담역의 발전”, “부모의 편지”의 구체화, 가치관을 기준으로 하는 가정 지원활동을 위한 정립 및 시험 등). 이 점에 관한 한 당면한 문제점 (예: 양육권과 가정권, 지원용 급부 등)을 제도적, 사회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3.4. 가정 센터

신연방주의 각 지역 생활공간의 사회복지적 인프라스트럭처가 열악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가정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마련된 “다기능 가정센터”라는 모델이 일부 신연방주에서 상이한 여건하에 시험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생활조건에 알맞게 개발된 이 모델은 하노버 대학부설 개발계획·구조연구소, 신연방주, 연방 가정·노인성이 합의한 가운데 수립되었다. 한 지역에 자

리잡고 있는 “다기능 가정센터”라는 이 방안은 대규모 지역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구서독지역의 가정교육센터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가정센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신과 정보 제공 (대화 씨클)
- 자녀가 있는 자모클럽을 위한 활동
- 가정의 자력구제를 위한 정보제공 및 접촉활동
- 가정교육 활동 (세미나)
- 가정을 위한 여가선용 (상이한 세대를 포함한)
- 특수 대외적 상담을 위한 접촉 중개
- 각 지역 차원의 가정의 이익 대변

다기능 가정센터는 이미 1992년 가을 Annaberg 와 Neustrelitz 에서 시험된 바 있으며 몇 군데에서 더 시험될 계획이다.

3.5. 가족휴식처 제공 및 상봉 주선

구서독주에는 자녀가 많은 가정, 장애자가 있는 가정, 독신양육자, 소득이 적은 가정을 위한 공익성 가족휴가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휴가센터에서는 가족과 노인들이 매우 저렴하게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시설과 주관 단체가 구축 중이다. 지금까지 14개의 가족휴가센터가 2,100만 DM의 연방 지원금을 통해 설립되었거나 정비되었다.

연방가정·노인성은 1992년 가정휴양 및 가정지원단의 공익성 주관단체와 함께 동·서독 지역 가정 상봉 프로그램을 발의하여 상호 이해심이 커지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상봉 프로그램은 가정지원활동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동·서독지역 가정이 같이 휴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므로 1993년에도 계속하도록 되어 있다.

1993/94년 중 연방 가정·노인성은 신연방주와 함께 처음으로 제3회 독일 가족휴가 연방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경연대회에서는 특히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휴가시설을 선보인 관광업체가 우수상을 받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관광업체로 하여금 더욱 가정에 친숙하고 가정에 알맞는 휴가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3.6. 산모요양제도의 구축

1991년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산모요양 및 모자요양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소유권 관계 및 법적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모를 위한 1,400개의 요양자리와 유아를 위한 2,000개의 요양자리가 있는 5개의 요양소가 복지단체에 의해 그 활동이 개시되었다. 연방 가정·노인성은 1991년부터 대대적인 정비와 개축공사를 위해 600만 DM 이상을 제공하였다. 12개의 요양소가 신연방주에 추가적으로 계획 중이다. 가정정책의 일환으로 산모를 위한 요양(모·자 요양 포함)은 실질적 가정 지원을 위한 중요한 일부로서 건강을 위한 조치임은 물론이고 사회교육적 프로그램 역시 내포된 것으로서 각 가정의 양육상태 개선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II. 경제적·사회적 변화속의 여성

1. 통일 이전의 상황

구동독시절 여성의 지위는 구서독지역 여성의 지위와 판이하게 달랐다. 여성의 직장생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요구되거나 일종의 법률로 규정화되다시피 했다.

1989년, 학계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5세부터 60세에 이르는 동독 여성의 취업율은 약 85%였으며 전체 근로자에 대한 여성의 비율은 48.9%였다. 동독 여성 취업자 전체의 약 90%는 최소 1명의 자녀를 갖고 있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산모 역시 직장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비단 공산주의라는 평등식 유토피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여성은 노동력으로서 이용되었으며, 또한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양육함으로써 가능한 한 조기에 사회적 영향을 주려는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탁아시설을 방대하게 설치함으로써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던 것이다.

그 결과 가정문제로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가 없어서 직장생활이 거의 꾸준하게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구동독시절 여성의 3분의 1 정도만이 시간제 근무에 종사했다.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동독 여성의 평균 연금불입기간은 구서독 여성의 연금불입기간보다 길었다.

3세 미만 어린이의 56%에게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유치원의 경우, 공급율은 113%로서 초과공급상태였다. 국민학생의 80%, 그리고 어머니가 직장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모두 보육원에 다녔다.

1986년부터 모든 어머니에 대해 육아양육기간에 대한 지불조치가 실시되었다. 질환에 걸린 어린이는 연간 최장 13주간 집에서 간병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독신양육자와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는 실질봉급의 70 내지 90%까지 받았다. 그리고 독신양육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타 특별규정에 의한 혜택이 있었다.

구동독시절 가정과 직장생활간의 진정한 선택가능성이란 오로지 얼마되지 않은 예외상황하에서만 가능했다. 유아의 탁아소교육과 보육원에 수용된 국민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공개적인 논의대상으로서 비판된 적은 전혀 없었다.

구동독 여성들 역시 구서독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라는 2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남자 역시 법률상 동반자로서 가정생활의 업무를 분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가정생활의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맡겨 졌다. 남녀의 역할 변화라든가 대등한 업무분담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 본적이 없다. 왜냐하면 여성의 직장생활과 더불어 여성의 대대적인 해방이 실현되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달랐다. 구동독 여성들은 구서독 여성들과 비교할 때 중급 지도층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었지만 국가, 정당, 사회, 경제계, 학계 등 정상급 지위에는 구서독과 마찬가지로 많이 진출하지 못했다.

1989년까지 동독이 유일하게 국가적으로 인정한 여성단체인 독일민주여성동맹(DFD)은 구동독 공산당의 공식노선을 대변하면서 여성들에게 사회주의적 의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독일민주여성동맹은 남녀평등 문제에 관한 비판적 논의 광장이나 사회 정책적 문제점에 관한 광장을 마련한 적이 없었다.

1989년 대변혁과 더불어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에는 새로운 동기가 부여되었다. 통일조약 제31조는 입법권자로 하여금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1,500 만 DM으로부터 2,500 만 DM으로 인상, 3분의 2가 증액되었다는 점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되었다.

신연방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신연방주 여성의 약 3분의 2가 실직자이다. 여성들에게는 직장생활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직이란 매우 감내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시종일관 여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여성들로 하여금 변화된 조건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서 보다 나은 구직가능성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준다.
-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단체를 통한 권익실현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2. 여성의 직장 생활

현재 여성의 실직율은 남성보다 거의 2배나 된다. 그 이유는 구동독 시절 여성들은 대부분 생산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대변혁 이후 생산업 분야가 기업체로서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즉, 섬유산업과 의복산업, 식품가공업과 기호품 산업, 화공, 경공업, 농업 등이 당면한 분야이다. 게다가 여성들 대부분은 고도의 자질이 요구되지 않은 직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오늘날 긴급한 경제적 구조변화 과정에서 이들 대다수의 직장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여성들의 실직기간은 남성들보다 훨씬 길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3분의 2 정도는 재정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나타나고 있

다. 즉 신연방주 여성들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는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있음이 사실이다.

2.1. 노동시장정책적 조치

여성의 과도한 실직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동시장정책적 조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1992년도 신연방주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약 406억 DM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서독주 전체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재원 중 여성들에게 상당량이 활용되었다. 연방정부가 고용촉진법 제2조 제5항(남녀구분에 따르는 노동시장 문제점의 극복)에 의거, 실직상태에 처한 여성들이 보다 많은 추가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한 것이 여성들에게 주효했던 것이다. 여성의 고용창출대책(ABM) 참여율은 1991년 7월 현재 34.5%로부터 1993년 7월 현재 49.3%로 증가되었다.

여성의 상당수가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이 점점 더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시에 직업상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방고용청이 실시하는 직능개선 조치에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93년 7월 현재 여성의 참여율은 65.1% 였다. 1992년 중 50만 명이상이나 되는 여성들이 보충교육, 직업전환교육, 적응교육 등에 참여한 바 있다.

1993년 가을 연방 가정·노인성은 장기 실직상태에 처한 여성들에게 구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조치로 특별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통해 장기실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적응교육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신연방주 여성 중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창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430,000건에 달하는 기업신설 중, 여성이 30 내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방정부

는 기업신설의 경우 대대적인 지원조치 (자기자본 형성지원 프로그램, 유럽 부흥계획에 의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저축부금 보조금, 상담지원 등)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도기 동안 신연방주의 창업활동을 특별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2.2. 상담제공

현실적으로 사회 전체에 걸쳐 극심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히 여성과 관련된 정보와 상담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연방 여성·노인성은 각 신연방주마다 하나의 모범상담소를 설치해 놓고 여성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안내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담소는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벽지에서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상담소는 예컨대 노동관청, 평생교육기관, 상공회, 지자단체 남녀평등 전담관 등과 같은 각 지역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각 지역 구조를 재편할 때 여성 특유의 권익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치는 주정부의 치밀한 안내 상담망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3.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

연방정부의 정책은 구동독시절 어머니들의 평생직장생활이라는 규정화된 획일적 모델과는 반대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어느 여성이라 할지라도 - 남자 역시 마찬가지로 -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구체화 해 나아갈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곧 신연방주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전적으로 가정에만 충실하던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순차적으로 조화시키든지, 동시에 영위하든지에 상관없이 이들이 지원을 받게 됨을 뜻한다.

3.1. 산모 보호

1991년 1월 1일부터 신연방주에도 산모보호법이 도입되었다.

단,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동독노동법전의 임신휴가, 휴직, 사회보장 보험 혜택 등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와 육아휴가에 관한 연방자녀양육비 지급법이 적용된다. 산모로 하여금 1년간 휴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구동독 규정 대신에 이제부터 산모는 3년간 휴직할 수 있고 2년간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2. 독신 양육자

신연방주 독신 양육자 현황은 (1991년 4월 현재) 594,000명으로서 전체 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볼 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구동독시절 역시 이들 독신 양육자들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만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주민의 평균 상태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였으며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실직 위험도가 커진 오늘날 독신모가 당하고 있는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독신 여성의 특수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주거, 어린이 돌보기, 상담 등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연방 여성·노인성은 독신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3.3. 탁아제도

신연방주에는 종전과 다름없이 탁아제도가 매우 훌륭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다. 1991년 1월 연방정부의 10억 DM 지원금과 3개주에 규정된 유치원 자리 신청권으로 이런 상황이 더욱 호전되고 있다.

3.4. 노후보장

구서독의 연금법이 신연방주에 이전된 이후 오늘날 수 많은 여성들은 구동독 시절에는 없었던 각종 지급신청권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50,000명의 미망인들이 처음으로 미망인 연금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780,000명에 달하는 미망인들이 월평균 270 DM의 연금을 더 받게 되었다. 연금제도가 단일화 된 다음부터 신연방주에서도 - 일부 특수규정이 있지만 - 구서독과 동일한 어린이 양육과 가정간병에 대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1993년 7월 1일 현재 신연방주 여성의 평균 가치분 보험 연금 수령액은 매월 950 DM으로 1990년 7월 30일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구서독 여성의 경우 직장생활기간이 짧기 때문에 757 DM 임). 1993년 7월 1일 현재 구동독 지역 여성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구동독지역 남성 평균 연금수령액 (1,468 DM) 보다 500 DM 가 적다. 그 원인은 신연방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취업기간이 짧고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4. 사회속의 여성

4.1 여성단체의 구축

신연방주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는 다원주의적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동서독이 통합된 이래 이익대변을 위하여서는 신연방주에 여성단체가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했다.

대변혁 이후 신연방주에서는 방대한 여성단체가 구성되고 각종 여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단체와 운동은 제1차적으로 지역적인 것들이었다. 여성단체의 권익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 지원, 생활지원, 사회복지적 지원 등을 중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성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것이었다. “신연방 여성단체, 여성집단, 여성운동의 구축과 촉진”이라는 연

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1991/92년 1,200만 DM에 달하는 중대한 출발지 원조치가 취해졌다. 1993년 연방정부는 신설된 각종 조직을 연결하기 위하여 약 100만 DM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새로운 조직을 공고하게 만들고 구서독주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 여성·청소년성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 700만 DM으로 각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독일 여성협의회(Frauenrat)가 주관하는 “여성단체 구축 연락사무소”를 위해 지원한다. 현재 이러한 연락사무소는 주정부 여성 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남녀평등담당관, 여성단체 등을 위한 상담역이 되었다.

약 468명의 지방자치단체 남녀평등 담당관은 여성과 가정이 수월하게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1991년부터 신연방주에서도 여성정보센타가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1993년 말까지 동 센타는 100개를 초월할 것이다.

4.2. 여성 보호소의 설립

구동독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라는 주제가 금기사항이었다. 1990년부터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보호용 주택과 상담에 관한 수많은 움직임이 자율적으로 일어났다. 1991년 연방정부는 120만 DM에 달하는 출발재원으로 46개에 달하는 여성보호소 내지 여성보호용 주택 설립을 지원하였다. 현재 여성보호소 관련 공급상태는 부분적으로 구서독주보다 심지어 양호한 편이다.

5. 전 망

통일과 더불어 평등정책 역시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게되었다. 즉 남녀시민들은 생활의 특징과 경험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기반 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정책의 기본원칙은 신연방주 여성의 특수상황을 배려해야 함은 물론, 신연방주 구축여건에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우선권을 부여함에 있다.

- 직업생활과 취업생활에 있어서 기회균등보장과 불이익 축소
- 가정과 직업간의 조화, 특히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위한 조건의 개선
- 가정과 교육에 필요한 활동의 대대적인 인정
-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 참여의 증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연방정부는 고용주 단체와 피고용인단체와 협조하여 신연방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홀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이 보장되고, 그들에게 직업교육훈련과 재교육 및 직장에 있어서 자리가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금년 4월 결정한 후, 현재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토론 중에 있는 제2차 평등법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평등법은 연방행정에 있어서의 여성지원을 법제화하고, 공직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법의 기타 중요 사항으로는 여성지원을 경영협의회와 인사협의회와 임무로 규정한 것, 근로생활에 있어서 평등한 처우를 효율적으로 관철한다는 점, 모든 취업자들이 직장에서 성적 희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점, 연방고위직에서의 여성 점유율을 개선한다는 점 등이다.

평등법은 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통일조약의 위임사안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평등법은 각 주의 평등법 제정을 위한 모범적 기능 및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경제와 사회전체에 대해서도 모범적, 선도적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신연방주 여성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III. 사회적 변혁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

1. 통일 이전의 상황

1989년 동독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독일이 통일된 다음,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와 미래가 활짝 열렸다. 그 이전에는 사회주의 통일당과 동독정부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체제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당한 관심과 막대한 비용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형적 사회주의적 인간”이 형성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국립 청소년 연맹”은 당이 규정화 해 놓은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자유독일청소년연맹(FDJ)과 청소년전사단(JP)에 의해 조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공산당은 청소년을 불신했다. 공공단체내의 독자적 움직임은 도청되거나 억압되었다. 감독상태에 처하지 않은 접촉관계나 영향력 행사와 같은 것은 그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대대적으로 감시되면서 격리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80년대 중반 이후 청소년들의 동독과 사회주의에 대한 동질감은 극적으로 줄어 든 다음, 대변혁과 함께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병행하여 전체 독일에 대한 동질감이 성숙되었다.

1990년 청소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독 청소년의 80% 이상이 독일 통일에 관해 긍정적 견해를 표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수치의 청소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 대변혁 이전과 비교할 때 - 미래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받아 들이고 있다.

오로지 극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80%는 수백만에 달하는 대량실업이 일어날 것으로 보며 76%는 동독의 경제현황이 불량 내지는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 3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야 경제부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0년 중앙 청소년 연구소).

그렇지만 실재는 다르다. 즉 1993년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83%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한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경제사정이 1년 이내에 개선 (32%) 내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을 계속 유지 (58%)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실무 위주 사회연구소 - Ipos, Mannheim 1993년). 그리고 청소년의 절대 다수는 종전과 변함없이 서독식 정치제도의 도입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다 (71%; 반대는 28%, Ipos 1993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적지않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변화를 방향 설정상의 위기로 받아 들이고 있다.

대대적인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위협 요소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사회라는 공동체의 약자인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변혁이 일어난 다음, 전적으로 자유독일청소년연맹에 의해 조직되었던 청소년 활동은 붕괴되었으며 청소년 클럽과 문화관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공개성 청소년 활동은 재정난에 처하게 되었다.

드메지어 수상에 의한 정부구성과 더불어 청소년 정책의 법적, 교육학적, 행정적 새로운 출발점이 모색되어야만 했다. 1990년 7월 20일 인민의회가 통과시킨 청소년 지원 조직법을 통해 서독식 청소년 지원법을 인수하기로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즉 이때부터 청소년 지원조치는 특히 예방적 지원을 강조하는 독자적이고 광범위하며 세분화된 과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은 청소년과를 설치할 의무를 갖고 있다.

통일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때까지 동독에서 적용되던 청소년법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래서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의 발효와 함께 가입지역에 대한 청소년 지원법(KJHG)이 새로 도입되었다. 물론 다수의 경과

규정을 통해 특수한 조건에 대처하도록 하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임무와 법적의무사항이 단계적으로 인수되도록 해 놓았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법률

동독 사회주의 교육제도 하에 부모는 자녀가 국가와 당에 충성하는, 즉 체제에 순종하는 교육을 시킬 법적 의무를 갖고 있었으며, 이와같은 의무사항은 곧 인민교육기관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와 반대로 서독에서는 국가 차원보다 부모의 교육이 우선시 되었으며, 국가는 단지 부모의 권한을 지원해 주는 급부제공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이었다. 즉 국가는 주로 독자적이고 사적인 청소년 지원단체와 복지단체(자율단체)를 지원해주는 형태를 취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육의 다양한 기본방향이 표출됨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부모에게 진정한 소망과 선택의 권한이 개방되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연방식 국가인 독일의 교육에 관한 대표적 특징은 교육의 임무를 가능한 한 시민차원, 즉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책임하의 지역적 사업이 되도록 방대하게 분산시킴에 있다. 청소년 지원법의 임무중 대부분이 이러한 임무에 속한다.

구서독지역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지원법이 시행된 이래 기존 청소년 지원구조(특히, 예방적 지원조치 및 교육에 대한 개별적 지원)가 계속 발전되어 나감에 비해, 구동독지역에서는 1990년 10월 3일 청소년 지원법이 발효된 이래 새로 설치중인 청소년과를 위한 인적, 재정적 지원에 치중하였다.

3. 청소년 지원의 새로운 구조

신연방주에서는 새로운 청소년 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청소년 지원 구조와 자율단체에 의한 청소년 지원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분간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 여성·청소년성이 일정 과도기간 동안 특수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 청소년 지원상의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관여하게 되었다. '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내·상담·연수 서비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의 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인력의 자질향상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신연방주 자율단체에 의한 청소년 지원 구조의 구축과 확충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AFT-Programm)을 통해 1992년부터 지역별 청소년 사업이 구축 내지 확충되었다. 나아가 연방 여성·청소년성의 정규 지원조치 (연방청소년 계획)를 통해 신연방주내 초지역적 청소년 사업과 교육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탁아문제 역시 구조적, 내용적으로 전환기에 처해 있다. 자녀를 위한 일일 보육시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안이었다. 1991년과 같은 어려운 과도기 중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일일보육시설에 10억 DM을 지원함으로써 크게 기여하였다. 유치원 자리확보를 위해 3개주가 합의한 법적장치 역시 긍정적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부터 연방정부는 일일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전파자(Multiplikator)에 대한 보충교육을 통해 교육학적 방법의 계속 개발, 보모용 교육자료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분야의 능률제고를 위해서는 - 일부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여 -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 문제이다. 직능자격 취득과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인정, 부족한 직능의 보완을 위한 교육 및 보충교육 등은 신속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대변혁 이후 청소년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한시적 지원조치로서 고용창출 대책에 의한 일자리가 상당수 마련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충적 재원지원과 함께 고용촉진법의 신규조항인 제249조 h를 통해 자출단체를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 실직자, 실직위험에 처한 사람, 이전에 고용창출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되었던 사람 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제공은 청소년 지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임무 수행과 재원조달을 책임지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정상적인 재정에 근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청소년, 홍보활동, 정책

청소년의 절대 다수는 새로운 자유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 한다. 이들의 60%는 자기계발 가능성에 관한 한, 과거와 비교할 때 오늘날 훨씬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3%는 자기계발 가능성이 악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26%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Ipos 여론조사 1993년).

젊은이의 극소수는 홀로 내동댕이쳐져 배척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젊은이들은 주변에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만한 구심점을 찾지 못할 때, 책임질 사람 또는 사회집단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때 자기파괴적 내지 사회 파괴적 행동방식, 즉 극좌 또는 극우 성향에 빠져들기 쉽다.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대다수가 변함없이 극우조직과 외국인에 대한 폭력 행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급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구동독 공산독재의 잔재와 변화에 따르는 불안심리가 신연방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같

은 것이 전적으로 신연방주와 관련된 문제만은 아니다. 연방 여성·청소년성은 폭력배제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주에 조직, 전문지원, 재원 등을 마련하였다. 즉 30 여곳의 문제지역에 대해 약 150가지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폭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원 조치가 수행되고 있다. 현재 각 주정부는 독자적인 지원활동과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설문조사와 청소년 연구에 따르면 동서독 청소년들은 지난날 생활 수준이 서로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점과 방향감각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절대다수인 90%는 민주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 구서독 청소년의 16%와 구동독지역 청소년의 40%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동독에서 실시되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거부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청소년 연구소의 Jugendsurvey 1992년). 계속 떨어지는 투표율과 일상생활에 관한 불만족은 정치에 대한 심각한 거리감 및 소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비정상적일만큼 컸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동독의 대변혁기를 계기로 일어났던 관심도가 이제는 정상화 내지 역전상태가 되고있음이 분명하다 (정치에 대한 강한 관심 및 매우 강한 관심: 구서독지역 32%, 구동독지역 23%, Ipos 여론조사 1993년).

청소년의 집단과 단체에 관한 결속성을 조사해보면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이 구서독지역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가정중심적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비공식집단이나 당파에의 결속성은 훨씬 약하다 (구서독지역 68%, 구동독지역 31%, Ipos 1993년).

각종 단체 회원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6세로부터 29세에 이르는 청소년)

년의 가입 비율 (%), 독일청소년연구소 Jugendsurvey 1992년).

	구동독지역	구서독지역
노조	22	15
직업조합	4	5
정당	3	2
종교단체	8	9
복지단체	1	1
향토봉사대	1	2
청소년단체	3	6
체육단체	22	38
사회단체	5	9
시민발의단체	1	2
기타 단체	5	8

구동독시절의 생활은 - 점점 벌어지는 거리감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에 대해 크게 기대하게끔 되어 있었다. 젊은이들은 세계가 변화된 것을 체험하였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홀로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 그들은 자유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영향력과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학교 밖에서의 사회교육과 정치교육은 전대미문의 중대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동·서독지역의 젊은이들 간에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시작이 연방정부가 2,000만 DM으로 지원했던 1990년도 '만남의 여름' 행사였다.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은 책임감있는 친한 사람들, 특히 부모와 교육자의 정감 넘치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집단과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IV. 노인을 위한 정책

1. 통일 이전의 상황

오늘날 통일독일에는 70세 이상되는 사람들이 약 800만명이나 된다. 그 중 약 650만명은 구서독지역에, 약 150만명은 구동독지역에 살고 있으며 70세 이상되는 사람의 약 3분의 2는 여성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오늘날 70세인 사람과 80세인 사람은 그 당시 각각 23세 또는 33세 였다. 오늘날 이토록 고령에 접어든 이 사람들은 공동의 운명을 회고하고 있다. 즉 그들은 청소년 시절에 나치스 독재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이러한 운명공동체는 분리되었다. 구서독지역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대대적인 재건에 착수, 안정된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풍요와 사회정의가 달성되었다. 이것이 곧 오늘날 통일독일을 부흥케 하는 훌륭한 기초이다. 그러나 전후 구동독지역의 발전상태는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 물론 독일의 다른 한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부지런히 일해야만 했다. 그들 역시 전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성공을 위해 동원되었다. 오늘의 노인들은 1945년 전쟁이 끝난 구동독지역에서 소련의 점령상태를 견뎌내야만 했다. 그들은 소련에게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40년 동안이나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독재를 참고 견뎌야만 했다. 즉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었다.

동독의 노인들을 위한 미사여구가 없을 리가 없었다. 공식적인 정치표현을 통해 '퇴역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주의력을 환기하자'는 구호가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이는 곧 '근로자와 청소년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감사하고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었다. 동독 헌법에도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즉 노인들은 보다 많은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과 간

호를 통해 안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의 규범과 실제 간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 사실상 동독의 노인들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배제된 후에는 동독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집단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구동독 공산정권이 남겨놓은 간병보호 대상자나 장애자를 위한 양로원의 열악한, 간혹 비인도적인 상태를 통해 너무나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노인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동독의 응급지원 조치 역시 인간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시민들은 주어진 공급상태만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러가지 개인적 요구사항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적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규모가 어디까지나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치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법률규정상 서비스의 임무가 정연하게 규정화되어 있었으며, 조직과 재원조달이 확정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모든 행정지구에 걸쳐 획일적인 파급효과를 미쳤으므로 이를 초월하여 여타 서비스 공급을 개발할만한 여지가 거의 없었다.

자율적인 복지단체는 단지 신교자선단과 구교자선단이 아주 제한적으로, 그나마 완전히 교회의 지붕밑에서 노인들을 위한 몇 개 안 되는 시설을 운용해 왔다.

구동독의 명목상 사회복지정책과 법률규정은 인간의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었으나 엄청난 실망감과 불만족을 가져왔다. 그 이유는 수요가 있어야 할 경우, 기대되는 지원이 따르지 않거나 불량상태로 수행되었거나, 오랫동안 기다린 이후에야 실시되었기 때문이었다.

노인들에게 적정한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건물파손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게다가 설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노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전화는 단지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조치 내지 예외적 사안일 뿐이었다.

1971년부터 진행된 주택 신축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동 프로그램에 의해 건설된 '노인들을 위한 주택' 역시 연금수령자의 1.6% 정도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되었을 뿐이며 그나마 구서독 수준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심각한 주택결핍상태에 처해 있었다. 노인들이 기거하던 약 45만개의 주택의 질은 매우 열악했다 (주택내에 화장실, 욕조, 샤워 등이 없었다).

2. 노인지원 구조의 새로운 구축

이미 1990년 전반기에 노인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의 재편작업이 준비되었다.

통일조약 제32조에는 사회복지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율적 사회복지사업 단체의 특수한 역할이 확정되어 있으며, 이로써 노인지원 분야에서도 연방주의 구조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자율적 사회복지단체 연합회가 이러한 임무를 인수하여 오늘날 신연방주에 있는 도시의 노인지원과 관련된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시설의 운용 주체가 되었다.

신연방주를 위한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공익성 운영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구축이 수월하게 되었다. 응급서비스 시스템 (ambulant System)의 구조개편을 위해 총 3,200만 DM이 마련되었다.

구동독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선택가능성이 없던 국가의 서비스 시스템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양로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자력으로 살아가던 노인들보다 그나마 재정 형편이 나았다. 양로원의 주거 조건 및 생활 조건에 있어서도 개인의 소망이나 기대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시했다.

특히, 명예직 근무를 활성화하고, 노인지원에 참여하는 단체의 기동으로서 자력구제적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관한 한, 여러가지 운명론적 경향이나 회의적 자세가 극복되어야 한다. 사회의 가치평가를 통해 참여의식을 고조시키고, 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한 주거상태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자 응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주택문제를 신연방주의 노인지원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그 규모에 있어서 구서독지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3. 긴급지원

연방정부는 내독간 경계선이 개방된 직후, 보호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조치에 착수하였다.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에는 소모품, 특히 신연방주에서는 미지의 사안이었던 현대적 간호용 보조재, 기술장비, 운영비품 등이 전무했다. 수리 또는 시설정비의 필요성은 고려된 바 조차 없었다. 건물은 심각할 정도로 손상되었다. 건물의 기본골조가 수십년간 쪼먹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개축 또는 보수할 가치가 거의 없게 되었다.

게다가 1989년 여름을 기해 발생하기 시작한 간병전문요원의 서독이주로 말미암아 양로원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가 위급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연

방정부는 이러한 현실이 공지화 된 이후부터 노인지원 관련 시설을 지원토록 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양로원에 관한 한, 모든 시설에 대해 동등하고 동시에 각 상황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동독지역에 있는 국립 및 교회소속 양로원과 간병요양원은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대소변을 못가리는 양로원 기거자를 위한 간병보조제, 창상에 따르는 와병치료 예방제를 비롯하여 휠체어, 승강장치, 병원용 침상 등을 받았다. 독일적십자사가 이러한 재료의 분배를 맡았다.

또 다른 긴급지원을 통해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양로원에 기거하는 간병대상자들의 현황이 개선되었고,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수월해졌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위해 총 1억 5,200만 DM을 사용했다.

4. 양로원과 양로원법

통독 당시 구동독의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의 약 90%에 달하는 자리는 모두 국가의 주관하에 있었다. 현재 국가의 점유율은 50%로 줄어 들었다. 즉 운용주체의 사유화 및 자율공익단체로의 이전은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다.

양로원에는 아직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자일뿐 마음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날 그들의 조건에 알맞는 주거지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연방주에 있는 대부분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일부의 경우 구제불능상태에 처해 있다. 엄청난 건물의 손상, 매호실마다 초과수용 상태, 매우 열악한 위생시설들이 그 대표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독일노인지원재단(KDA)이 실시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양로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85,000개의 자리는 폐쇄조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92

년 10월 말에 개최된 각주 노동·사회성장관 회의에서는 작센주에 관한 연구보고를 근거로 약 40%에 달하는 신연방주내 양로원 및 간병양로원이 철거대상으로서 조속히 신축건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 결정되었다. 또한 약 30%는 정비대상이고 20%는 중기적 수리대상이며 오로지 10%만이 그나마 기본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거의 모든 시설이 양로원 건물 유지를 위한 최소규정에 부적격하며, 단지 일부만이 이 규정에 부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조약과 관계되는 양로원 건물 최소유지규정 제30조에 따른 것으로서 평준화하려면 통상 10여년은 걸릴 것이다.

이미 긴급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율 복지사업단체들은 긴급한 수리 조치 및 현대화 조치를 위해 3,000만 DM을 활용하였다. 또한 2억 5,000만 DM이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 있는 노인지원 관련 시설 약 1,400개의 정비와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었다.

간병양로원 역시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투자활동의 중점지원대상으로 총 15억 DM을 지원받았다.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의 열악한 상태, 그리고 생활수준의 조속한 평준화의 필요성을 근거로 연방정부와 각 신연방주 노인정책 담당 장관들은 1991년 9월 11일과 1992년 4월 31일 막테부르크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긴급지원조치가 종결된 이후에도 양로원의 건물골조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합의하였다.

건물 정비 과정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가정·노인성의 재정지원하에 1991년부터 “독일 노인지원재단” 내에 노인지원시설 및 그 운용단체를 위한 무료상담소가 설치되었다. 무료상담소는 건축계획, 경영, 간호조직 등에 관한 한시적 상담과 같은 출발지원조치를 취해 준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계획이 잘못 추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용창출 긴급조치와 간병요원의 대대적인 개선 등을 통해 양로원에 근무하는 인력이 양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교육훈련과 보수교육을 위한 능률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확충하여 질적 결함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5. 복지원-외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조직

입원대상 노인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양로원과 간병양로원을 이용하여 거주자의 생활상태와 서비스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였음에 반해, 외래 분야의 상황은 전연 달랐다.

신연방주가 구서독주로부터 받아들인 외래 보건 및 복지 서비스인 사회복지원은 구서독지역에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는 조직이었으나 신연방주에게는 전적으로 생소한 조직이다. 복지원은 기존의 간호 서비스 구조를 대신한 것으로서 구서독에 비교할만한 다원적 서비스를 갖추지 못했으며 물질적, 기술적 장비면으로 볼 때도 구서독 수준에 훨씬 뒤떨어진다.

연방정부에 의한 3,200만 DM의 긴급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창출대책의 활용을 통해 신연방주에 복지원의 전국적 망이 구축될 수 있었다. 최초의 복지원은 이미 1990년 8월 에어푸어트에 개설되었다. 이와같은 변형과정에 있어서는 기존 서비스 (예: 도시간호원 파견소를 통한 가정방문 간병)가 일단 새로운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경우에만 해체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현재 약 800개의 공인된 복지원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자율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복지원은 훌륭한 간병보조재, 기술장비, 차량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복지원의 성공적인 개편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의 재원조달 문제, 한시적인 인력투입 등과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액은 부족하며 의료보험에 의한 지급 역시 불충분하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인력의 절대다수는 고용창출대책에 의한 인력으로서 근무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간병분야의 대부분 인력이 확정된 채용관계에 있는 반면, 가정간병 및 가사조력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 여성직원들은 아직도 고용창출대책에 의한 인력이다. 아직도 고용창출대책에 의한 지원조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2년간의 지원기간이 끝나면 인력교체가 불가피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복지서비스 근무인력의 계속 근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새로 마련된 촉진장치인 고용촉진법 제 249조 h 는 고용주체자로 하여금 정식고용을 수월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대책에 의한 지원이 끝나도 계속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연방정부는 연방 재정건실화 프로그램(FKP)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용 재원으로부터 각 주정부에게 고용촉진법 제249조 h 에 입각, 긴급 보전용 재원 1억 5,000만 DM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6. 자율단체의 참여

신연방주내 보조원칙의 단계적 실현과 함께 자체책임수행과 자력구제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명예직 봉사활동이 그 핵심으로서 사회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것은 비록 신연방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전적으로 기본적 생활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아직도 사회적 중요성으로 볼 때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연방 가정·노인성은 “노인사무소”(Seniorenbüro)라는 모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명예직 봉사활동의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기관이 갖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직업생활 이후의 활동분야 소개 및 명예직 사회 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에 관한 상담
- 자력 구제 활동과 자력 구제 단체의 구축
- 노인들을 이웃에게 소개시켜주고 각종 관계를 맺도록 하는 활동의 개발

양로활동 주관단체에 의한 현상모집에는 예상외로 훌륭한 반응이 뒤따랐다. 각 지역에 걸쳐 사회복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회단체, 노인단체, 교육기관 등이 함께 모여, 협력을 위한 합의조치를 취했으며 일부에 있어서는 운영단체 연합회도 구성했다.

1992년말 현재 3개의 노인사무소가 업무를 개시했으며 1993년 중 32개에 달하는 노인사무소가 신연방주를 중점대상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50세로부터 65세에 달하는 연령집단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개인적 인생계획과는 달리 조기퇴직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동시에 남게 된 시간의 일부를 사회복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오리엔테이션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방 가정·노인성은 작센 안할트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에 모델 프로젝트를 수립해 놓고 조기정년에 처한 사람들에게 미래의 전망을 열어주고 의미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V.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 (Zivildienst)

1990년 4월 구동독은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부여하였다. 통일조약과 더불어 구서독의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법(Zivildienstrecht)이 신연방주에 도입되었다. 이로써 병역대

체 사회봉사근무 행정기관은 약 100,000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중 이미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22,000명을 관리하고 28,000에 이르는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용 일자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임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무는 단 3개월 만에 해결되었다.

6개의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단과 20명의 지역관리관이 한 개의 지역 관리행정기관을 구성하였다. 연방 병역대체 사회봉사 근무청 (필른 소재)은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자의 소집과 퇴역과 같은 주된 과제를 비롯하여 각 근무처와의 정산업무를 인수하였다. 베를린에 있는 지휘부대가 필요한 조정 임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2개의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 학교가 개설되어 있다. 1991년부터 각 부대에게 배속된 병역 대체 사회봉사 근무자를 위한 국가적 행정임무가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구동독 시절, 무기를 든 군인으로서의 근무를 거절하여 소위 건설병으로 투입되었던 병역 의무자들에게는 법적으로 공인된 병역 거부자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

구서독법의 구동독지역 위임은 완료되었다. 그리고 병역대체 사회봉사근무의 새로운 조직 역시 거의 완료되었다.

제 8 장 문화 · 언론 · 스포츠

I. 문 화

1. 통일 이전의 상황

동독의 문화와 동독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의 문화 정책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화란 것은 수십년간 형성되어 온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어, 그 영향력은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고 제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독은 공식적으로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를 구분해 내려고 시도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한번도 성공할 전망이 없었다. 예술가들을 포함한 동독 주민들의 대다수는 독일과 유럽의 공통의 문화적 역사, 서독의 (전파)매체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선된 동서독 간의 인적 교류로부터 자극과 계몽을 받았다.

동독의 문화 정책을 보면 적극적인 개입의 단계와 상대적인 자제의 단계가 교차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독 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은 모든 문화 활동을 정치적으로 규제하고자 시도했는데, 이같은 시도는 극단적인 경우 문화 활동의 금지, 해외 이주, 도피 내지는 구금과 같은 침해한 갈등을 야기시켰다.

동독 정부는 자국의 문화정책적 목표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화행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했다. 어느 나라나 자기 나라의 공공수치들(예를 들면 극장 및 박물관 방문객 수나 또는 문화행사의 수)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동독이 문화행사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면에서는 동독의 문화는 주로 기존의 시설물들을 활용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예술대학, 이와 연관된 특수 음악학교들 그리고 예술전문학교들의 물질적인 여건은 대체로 미비했다. 건물들의 원형은 종종 낡고 손상

되었으며, 작업실, 스튜디오, 문화시설물, 장비, 서적등 문화 비품들도 대부분 노후한 것들이었다.

국가적인 기념물, 특히 기념비적인 문화재의 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새로운 보수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외에도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몰락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참으로 한탄스러운 정도였다. 신축물은 거의 전무했다 (특히 동독은 40년동안 단지 1개의 미술박물관과 1개의 콘서트홀을 건축했음). 일반적인 고용 정책은 비효율적인 관료기구들을 생겨나게 했으며, 이들의 활동들은 주로 통제와 지시속에 이루어졌고, 이들이 창출한 문화적인 가치는 이미 구동독시절에도 전문가들에 의해 의심스러운 평가를 받았다(예를 들면 많은 “문화의 집” 또는 “초소형 도서관들”).

비록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문화 이론인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라는 공식적인 예술정책이 점차적으로 확고하게 관철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분들, 예를 들면 동서독간의 문화 교류같은 것은 끝까지 사회주의 통일당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동독은 초기에는 전독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을 통해 서독 지역에까지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를 강화했으나, 나중에는 서독측이 강조한 단일한 민족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폐쇄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2. 통일조약 제35조에 따른 문화적 원형의 보존

통일조약 제35조 제1항은 서독과 동독이 비록 상이한 문화적인 발전을 해오기는 했으나 예술과 문화가 독일 민족의 일체감을 지속시키는 기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통일조약의 입안자들은 동독의 문화적 원형이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며(2항),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장해주고(3항), 문화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7항)는 내용들을 조약에 포함시킴으로써 통일로 야기된 특수 상황을 고려에 넣었다. 또한 통일조약은 독일 헌법인 기

본법의 관할권 분배 원칙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과도기간에 대해 연방의 “공동 재정 조달”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조약 35조에 의거 연방 내각은 1990년 11월 14일과 1991년 2월 26일 구동독 및 동베를린 지역에 있어 문화 부문을 과도기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부록 Nr.203 표 참조).

- 원형 보존 프로그램
- 문화 간접 시설 프로그램
- 기념물 보호 특별 프로그램

통일조약 제35조를 기초로 그리고 서독의 재정 및 인력 지원으로 동독 지역의 문화재들이 보존되었고 문화 부문에 필요한 구조 조정을 위한 전제와 기초가 마련되었다.

문화 부문의 조정 과정에서는 서독에서 이미 그 제도적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는 다원주의적 문화 이해 및 사회 이해를 기초로 분권(分權) 원칙, 보조(補助) 원칙¹⁾, 예술 자유의 원칙 그리고 예술적인 결정에 대한 국가 간섭 배제의 원칙들이 자리를 잡아갔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자신들이 환영한 원형 보존 및 문화 간접 시설 개발의 필요를 처음부터 기존의 것을 보존하라는 과제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조형(造形)의 과제로 받아들였다.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문화 시설물들은 대부분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로 넘어갔다. 한편 과거 행정 지구(地區, Bezirk)나 문화부가 직접

1) 보조 원칙(Subsidiarität)이란 일반적으로 사회, 정치 영역에서 상위 단체는 하위 하위 단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과제에 대해서만 이를 떠맡음으로서 하위 단체의 활동을 보조, 촉진한다는 원칙을 말함.

관장하던 시설물들은 우선은 주정부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존의 행정 구조가 책임을 떠맡았다가 이양되었는데, 이같은 책임 이양 작업은 옛 기관들이 새로운 기관들에 의해 대체되는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만 했다.

2.1 원형 보존 프로그램

원형 보존 프로그램의 재원은 특히 국가적인 의의를 지닌 문화 시설물 및 문화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었다.

재원의 분배는 주정부들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한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다. 이 전문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연방 차원의 지원이 특히 다음과 같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유럽적인 또는 민족적인 중요성을 지닌 시설물 또는 문화 행사
- 해당 지역에 중요한 극장, 박물관, 오케스트라, 도서관
- 과거로부터 전해 오며 현재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행사들
- 문화 영화의 지원
- 기념물

2.2 문화 간접 시설 프로그램

문화 간접 시설 프로그램은 지방 자치 단체, 시, 각 행정 구역의 문화 시설물 및 문화 행사들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그 구조를 현대화시키며 나아가 지역적인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조형 예술, 음악, 문학, 영화 및 매체들, 도서관, 박물관, 보관소, 기념물 관리, 청소년 및 성인 대상 문화 교육, 민속학 및 지방학등의 문화 활동들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청소년 문화 교육 및 음악학교 확충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문화활동이 중점적인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전적으로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분배되고 있다. 재원의 분배에 있어 각 주들은 각 주별 인구 및 면적을 기초로 결정한 분

배방식에 따르고 있다. 각 개별 조치당 연방의 재정 지원은 전체 소요경비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

2.3 기념물 보호 특별 프로그램

기념물 보호 특별 프로그램은 이동 불가능한 문화적 기념물이나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개별 건축물)의 안전, 보존, 복구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개별 영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안전 조치 (기후로 인한 손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침입, 절도 행위로 인한 손상 보호)
- 기념물 보호하에 있는 문화재의 파악 및 실태 조사
- 기념물 관리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이동 불가능한 문화재의 복구 작업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의 협의하에 실행된다. 연방 재정 지원은 소요 경비의 49%까지이며, 이같은 지원은 따라서 적어도 동일한 규모의 투자 재원이 투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같은 방식으로 특히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제공 기회가 확대되었다. 독일 기념물 보호 재단은 구동독 지역에 대한 설립 기금을 지원받았는데, 그 규모는 1991년 1,000만 마르크, 1992년 2,300만 마르크였다.

2.4 기타 문화 지원

연방 정부는 통일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동독의 결정적인 예술가 지원제도인 “문화 기금”이 통일조약에 고려되도록 배려했다.

1990년 9월 공법 재단으로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 이 기금은 적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존속하게 되어 있다. 통일조약에는 과도기간 동안 연방의 공동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서독과 구동독간 지역간의 문화적인 접촉 및 결속을 강화하고, 구동독 지역에 있어 전시 부문, 초청 행사 그리고 축제(페스티벌) 부문의 새로운 활동들을 장려하며 나아가 국제간 문화 교류의 취약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방 내무성은 2,500만 마르크(1991-93년)의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동독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차원의 문화 지원금은 1991년-1993년 기간중 총 32억 마르크에 이르고 있다 (민족적인 의의를 지닌 문화재 장기지원기금 포함).

구동독과 베를린 지역은 필요한 주정부의 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 부문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동독 지역 주정부들은 가치있는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 부문의 필요한 구조 조정 작업을 위해 이념적인 면에서 그리고 재정적인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로써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 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문화정책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구서독의 각 주들은 처음부터 상당한 인력 및 물질을 지원함으로써 구동독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 보존에 일익을 담당했다.

3. 범국가적 의의를 지닌 문화재의 지원

3.1 베를린

베를린은 이미 독일 통일 전에 연방 정부의 중심적인 문화 지원 대상이었다. 1990년까지 연방 내무성에게 배당된 문화 부문 예산의 50%가 베를린에 지원되었다. 그중 “프로이센 문화 관리 재단”과 “베를린 축제 회사”가 베를린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고 베를린의 동서 지역이 결합됨에 따라 동베를린

지역의 문화재들이 계속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베를린이 자력으로 베를린 지역의 문화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해서는 모두가 의견이 일치했다. 따라서 통일조약 제35조 제4항은 구동독 시절 중앙 정부가 담당했던 특히 베를린 지역의 문화 시설들에 대해 연방이 공동으로 재정 지원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베를린을 통일 독일의 수도로 규정한 통일조약 제2조 제1항 (1)에서도 볼 수 있다.

통일조약의 이 두가지 조항을 기초로 1991년부터 연방 재정 예산에 베를린 지역의 대표적 문화 시설에 대한 연방 지원을 위한 특수 항목이 설정되었다. 이 외에도 베를린은 구동독 지역의 문화 원형 보존과 문화 간접 시설 확충 및 기념물 관리를 위한 연방 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

1991년 6월 20일 독일 연방 하원은 국회 및 연방 부처의 일부를 베를린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로써 베를린 지역의 문화 시설 및 문화 행사에 대한 향후의 지원 문제는 새로운 비중을 갖게 되었다. 그간 이에 관한 협정이 하나 맺어졌는데, 이 협정은 베를린 시를 국회 및 일부 연방 부처의 소재지로 확충하는데 있어 연방 정부와 베를린 시(市)참사회간의 협력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또한 연방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범국가적인 의의를 지닌 문화 시설과 관련 특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베를린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화 기관은 프로이센 문화 관리 재단이다. 이 재단은 궁극적인 규정에 이르기까지 연방과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운영 및 재정을 담당한다. 이 재단은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소재 프로이센 문화재도 잠정적으로 관리한다. 베를린 지역 국영 박물관들을 프로이센 문화관리 재단 산하에 통합하는 작업은 조직상으로는 이미 완결되었다. 이제 문화재들의 공간적인 통합만 이루어지면 이 종합 박물관은 그 수집물들의 다양성,

체계성 그리고 완전성이라는 면에서 유럽과 전 문화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박물관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한 조직상 이 문화 재단 산하에 통합된 국영 도서관들도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종합 학술 도서관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수집문화재나 조직들의 실질적인, 즉 공간적인 통합은 다만 단계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 수요를 수반하는 건축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동독 예술 아카데미는 대규모의 문서보관소들, 수집물들, 도서관들 그리고 몇몇 기념사적지들을 관장했었다. 그러나 이 아카데미는 동독 5개주 및 베를린과 맺은 국가 조약에 따라 해체되었다. 중요한 문서보관소들은 수집품, 도서관등과 더불어 특별 재산으로 베를린 동물원내 예술 아카데미의 연구 부서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기념사적지들은 특별 규정의 대상들이 되었다.

3.2 신연방주

문화라는 것이 현대 산업국가들의 근본적인 구조적, 사회정책적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동독 주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의 의회들은 이미 초기 예산 설정에서 예술 및 문화 지원 부문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할당했다. 그러나 향후의 상황은 보다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화 지원 부문이 일정한 가용 재원을 놓고 여타 해결되어야 할 상당수의 과제들과 경쟁해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과 더불어 연방 정부가 구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동독 지역에서도 범국가적인 의의를 지닌 특정 문화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또 지원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방 지원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논의도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91년에 민족적인 또는 세계적인 수준의 몇몇 기관들은 연방의 지속적인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 관리하의 성(城)들과 포츠담 쌍수시 정원

- 라이프찌히 소재 바하(Bach) 문서고
- 데사우 건축 학교
-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
- 부헨발트 사적지
- 소르브인들의 문화 시설

동독주들은 현재 연방 정부의 원형 보존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일련의 여타의 문화 시설들도 영구 지원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중부 독일 바로크 음악” 연구 그룹과 같은 프로젝트들, 시한부 지원 프로그램인 “작센 음악”, 종교 개혁 사적지, 뵘리츠(Börlitz), 코트부스-브라니츠(Cottbus-Branitz), 바드 무스카우(Bad Muskau)의 정원들, 할레 소재 프랑크 재단, “문화 도시 바이마르” 프로그램 또는 드레스덴과 슈트랄준트 박물관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방 정부의 지원은 주정부들의 의사에 따라 이 문화 시설들의 국제적인 영광을 회복하고 상당한 투자 수요를 실시하는 것 이어야 한다.

동독 영화 부문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통일과 동시에 동독 영화 생산업자, 영화 제작업체, 영화관에 대해서도 연방 문화 영화지원이 제공되었다. 그동안 일반 문화 영화지원 및 문화 부문 과도기 재정지원의 범주에서 동독 지역에 8,000만 마르크 이상의 지원금이 흘러 들어갔다.

구동독 지역의 가장 중요한 영화생산지로 전통이 가장 풍부한 포츠담-바벨스베르크의 스튜디오들의 경우 신탁관리청이 바벨스베르크의 DEFA-회사들과 관련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고액 투자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지역은 계속 영화생산지로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연방 정부는 민족적인 문화 유산의 하나로 677개의 극영화, 2,238개의 기록 영화 그리고 752개의 애니메이션(트릭) 영화들을 가진 DEFA 영화스토

크가 해체되는 것을 막고 활용가능한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 베를린시,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와 공동으로 DEFA 영화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일조약은 소수민족으로서의 소르브인의 특별한 위치를 감안, 소르브인들의 문화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작센주가 브란덴부르크 주 및 연방 정부와 합의하에 설립한 비독립적인 “소르브 민족을 위한 재단”은 원칙적으로 소르브인들의 참여하에 국가 차원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공동 기구이다. 연방 정부, 작센 주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주가 이 재단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소르브어(語)와 소르브인들의 문화적인 다양한 표현들을 보존케하는데 기여했다.

4. 도서관, 문서보관소, 문화재 반환

통일과 더불어 도서관 및 문서보관소의 영역에도 새로운 조치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도서관 부문을 보면 각 주들은 효율적인 도서관 시스템의 설립과 확충 작업을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켰다. 효율적인 도서관 시스템이란 각 개별 도서관들을 상호 연결시켜, 누가 그 도서관을 운영하고 또한 그 도서관이 어떤 특별한 과제를 지녔는가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기능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각 주의 공공 도서관들은 연방 정부의 연방국가적 구조에 부응하여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같은 전제하에 동독지역의 각 주들은 처음부터 이 부문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4.1 도서관

양 독일국가가 통일됨에 따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독일 도서관(Deutsche Bibliothek)” 과 라이프찌히 소재 “독일 도서관(Deutsche B cherei)” 은 각 소재지는 그대로 두고 “독일 도서관(Deutsche Bibliothek)”이라는 명칭의 연방 관청의 형태로 합병되었다.

이같은 합병 구상은 다음과 같은 기초에서 생겨났다:

- 각 소재지에는 효율적인 도서관 및 전문 인력이 보존되어야 한다.
- 각 소재지의 중점 분야는 제거하거나 이전될 수 없으며 단지 특별한 한 장소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장서 확충시 이중 작업을 피하고 라이프찌히와 프랑크푸르트에 동일한 관리 수준을 창출해야 한다.

이같은 합병작업은 동서독 지역간 통합의 성공적인 모델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 도서관”은 독일의 중심적인 문서자료실이요 범민족적인 서고(書庫)이다. 이 도서관은 1913년 이래 독일에서 출간된 인쇄물 및 제작된 음반(音盤)들, 1913년 이후 외국에서 간행된 독일어 출판물, 다른 언어로 번역된 독일 작품들, 다른 언어로 쓰여진 독일에 관한 인쇄물들을 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서지학적으로 분류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독일 최대의 이 “독일 도서관”에는 1991년 12월 31자로 1,430만건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라이프찌히 927만 4천건, 프랑크푸르트 447만건, 베를린 56만 1천건) 그 장서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자료의 양은 1982년 12월 31일의 1,003만권보다 39% 늘어난 수치이다.

“독일 도서관”은 독일 민족의 장서를 다양한 분류와 집적단계에 걸쳐 인

쇄물 또는 전자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간행하고 있다. 이를 넘어 독일 도서관은 중요한 도서관, 서점, 문헌적인 기록을 지닌 학술기관들을 위해 카드 목록, 자기 테이프, 디스켓, 온라인 서비스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로써 독일 도서관은 독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도서관 제도를 위한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하며, 감명을 줄 정도의 국민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4.2 문서보관소

동독 시절 문서보관소들은 중앙 집중화의 경향이 심했다. 따라서 독일 헌법정신에 부합해서 각 주와 광역단체들은 가능한 한 중앙집권식 체제에서 독자적인 관할권으로 이행작업을 실시했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통일조약에 의해 연방 문서보관소법은 구동독 지역에도 확대·적용되었다. 다양한 관할의 동독의 국가 문서보관소들이 연방 문서보관소에 귀속되었다. 이로써 국가기관에서 생겨난 문서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조직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정당 및 대중 조직들 산하의 문서보관소들의 지위는 미결정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여기에는 특히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당문서보관소가 있다. 이 문서보관소들은 정당 또는 조직체의 전송문서들 외에도 국가적인 과제를 인식하는 가운데 생겨난, 따라서 연방이나 주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들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추상적으로 문서자료들을 분리해낸다면 문서보관소 자체나 기록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 문서는 독일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1992년 3월 13일 연방 문서보관소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공보 I, p 516참조)과 1992년 4월 6일 연방내무성 법령 개정을 통해 독일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닌 이 유산이 미래에까지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법령에 의거 연방 문서보관소내에 설치된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문서보관소 재단”은 1993년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이 문서보관소들에 대해 권리를 가졌거나 주장하는 모든 이들과 반입 계약의 준비 및 체결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재단에 반입된 엄청난 량의 정당 및 대중 조직 보관자료들은 이로써 일반 대중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 문서보관소법은 문서보관소 자료 이용을 위한 30년간의 규칙 준수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그 같은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계, 특히 시대사 연구를 위해서는 이 재단에 반입된 자료들은 명확한 법규에 따라 풍부한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다.

4.3 문화재 반환

문화 유산의 보존 및 보호와 관련 특히 중요한 것은 독일 정부와 각 주들이 구소련 후속국가들로부터 문화재 반환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다. 1990년 11월 체결된 독-소 조약에서 유실 또는 불법적으로 옮겨진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박물관 재산, 서적, 문서 자료등에 관한 협상과 전문가들의 대화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 문제가 언제 종결될 수 있을 것 인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독일은 폴란드와도 조약을 통해 문화재 및 문서 자료와 관련한 문제들에 관해 협약을 맺었다. 행방불명되었거나 불법적으로 고향에서 옮겨진 문화재들을 파악하기 위해 연방과 주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사 작업이 실시되었다. 1991년 베를린에는 기록실이 설치되었다.

5. 교회를 위한 연방 정부의 특별 지원

구동독 지역의 교회들의 대부분은 자력으로 교회 건물, 목사관 및 기타 시설들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없었다. 재정 부족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교

회들의 경우 필요한 보수 허가나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과거 연방 내독관계성은 오래 전부터 동독 교회들을 지원해왔다.

연방 내무성은 동독 교회에 대한 이같은 지원의 속행으로 1990년과 1991년 동독 지역 교회 건물 보수지원을 위해 매년 8,000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이같은 재정 지원과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동독의 교회들이 그같은 재정적 도움이 없다면 지난 40여년간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정치 분위기 속에서 건물 원형에 가해진 손상들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카톨릭 교회들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여러 유대 교회들과 몇몇 소규모 지역 교회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6. 동부 및 동남부 유럽 소재 독일 문화유산의 보존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법적으로 동부 유럽 및 동남부 유럽의 추방 지역 및 이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독일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독일 민족과 외국인의 의식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법적인 임무들이 독일 통일 이전까지는 단지 서독 지역에서만 수행될 수 있었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연방 정부는 문화적 과제를 동독 지역에도 적용했다. 자국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한 연방 정부의 기여는 주로 대중적인 문화 활동, 학문 및 연구, 도서관, 예술과 음악의 장려, 그리고 박물관의 확충 지원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라이프찌히 대학에는 “중동부 유럽에서의 독일 문학과 독일어”라는 강좌가 재단 강좌의 범주에서 지원된다. 그라스발트 대학

에 “포메른의 역사와 문화”라는 강좌가 개설될 것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에 속했던 동부 지역과 독일인들의 이주 지역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서술해 줄 주립박물관의 확충 및 신축 작업은 문화 유산의 보존이라는 법적인 임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여기에는 특히 두가지 프로젝트를 언급할 수 있겠다:

- 작센주 및 괴어리츠(Görlitz)시와 공동으로 괴어리츠 소재 르네상스-세속건축물인 “선호프(Schönhof)”에 슐레지엔 주립박물관 설치
- 그라이프스발트시 중심부에 역사적인 가디언 하우스(Guardian Haus) 주변 건물군들에 그라이프스발트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및 연방 정부 공동으로 포메른 주립박물관을 설치한다는 계획

7. 원형 보존 및 구조 변경

통일조약 제31조에 근거한 연방의 문화 부문 과도기 재정지원에 의해 동독의 문화 풍경은 원형 보존과 구조 변경이라는 두가지 혼합물이 복잡하게 뒤섞인 형국이 되었다. 문화 부문 구조 조정에 있어 중요한 계기들은 다음과 같다:

7.1 문화와 연방 국가

독일 통일의 완성과 더불어 나타난 정치, 사회, 경제 부문의 변화는 문화활동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직면에 있어 문화 부문의 가장 중요한 진로 설정은 중앙집권화의 탈피와 새로운 연방국가적 문화 제도의 확립이었는데, 이는 문화 시설들을 주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예외적인 경우로 문화시설을 민영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주들은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의 문화적인 자율성을 장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발달된 문화 공간을 특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떠맡게 되었다.

재정 문제, 인사 문제의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을 넘겨받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동독에서 현지 담당기관에 관할권을 이전하는 작업은 문화부문에서 다원적인 구조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로 작용했다.

7.2 조직의 개편

몇몇 동독의 특수한 문화 시설들은 폐쇄되거나 민영화되었는데, 국영 예술품 거래, 콘서트 및 출연 감독, 광역단체의 문화행사들, 기업체 또는 독일 청소년자유연맹(FDJ) 산하 문화의 집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인력 감축이 있었고, 이는 전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극장과 오케스트라와 같은 대형 문화시설들은 실제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했다. 1991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권을 넘겨받은 후, 그리고 1992년 합리화구상 작업을 내놓은 이후 실제로 부적절한 초과인력들이 1993년중 효과적으로 감축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화 시설의 기술적인 부문에서도 추가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작업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거의 모든 문화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를 지녔다. 그러나 이를 현대화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시설 분야에서 상당한 비용증가를 의미했다. 동독의 문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서독 수준의 효율성을 갖게 되려면 앞으로 몇년 안에 기술적인 면에서 서독에 비견할 정도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7.3 협력과 경쟁

이미 성장해 있는 문화 풍토를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시간과 돈을

요구한다. 이에 관한 결정들은 각 주 정부들과 지자체들이 내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해당 부서가 오래 전부터 처음으로 다시 독자적인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이므로, 연방이 재정 지원을 구실로 이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 조정이 가장 어려운 부문은 극장이다. 동독의 모든 주정부들은 극장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했으며, 극장의 합병 또는 개별 도시들의 다양한 연극 종류의 변경에 관해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극장 부문에 있어 앞으로 몇년 내에 재정적인 면이나 관객의 호응도 면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문화 부문의 가장 괄목할만한 구조 조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극장과 다른 문화 시설들의 협력 모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적인 현대화 및 신축을 위한 재원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이같은 논의는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간접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각 도시들은 올바르다고 인정되는 문화 구상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예술가들의 직업적, 사회적 상황도 근본적으로 변했다. 특히 자유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은 과거의 “보호받던 상황”에서 문화시장이라는 격심한 경쟁 구조로의 전환 과정에 처해 있다. 이같은 과정은 기존의 낡은 구조들이 무너져버리거나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구조들 - 예를 들면 노련한 전시 활동, 활발한 화랑 전시, 출판 활동의 모색 등 - 이 이제 막 생성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예술가들은 예술적인 활동을 시장화하는 법을 배우는 학습과정이 또한 필요하다.

8. 결 론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동독 지역에서도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인들이 문화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에 따라 예술 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특히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술과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할 책임을 지고 있다. 기존의 동독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체 문화풍토를 조직적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재정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화 시설들은 상당한 연방재원의 투입을 통해 보존되었다. 노후한 문화부문의 기술적 시설물들은 물론 현대화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

특히 문화의 집 또는 클럽 하우스, 영화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던 소형도서관 등은 많이 손실되었다. 재정적인 면에서나 주민들의 호응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문화시설물들은 미래에도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동독에서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관객의 호응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낮은 가격과 임금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동독의 문화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을 겪게 되었다.

과도기간중 문화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내적인 독일 통일의 성취를 위한 거대한 노력에 있어 한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이같은 지원으로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조 조정과 조직 개편을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연방 정부가 동독의 문화부문에 지출한 돈은 대체로 서독의 평균 지출에 맞먹는다. 지방 자치 단체들의 문화부문 지출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

몇몇 문화 시설(예를 들면 극장)의 경우 앞으로 몇년간 중요한 조직 개편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지역에서도 이제 관객과 예술가들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찌시대와 구동독의 장기간에 걸친 고립 상태를 벗어나 유럽과 세계와 더불어 예술적인 공동 작업을 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II. 언 론

1. 통일독일의 방송체제 개편

동독의 방송은 무엇보다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동독의 방송은 1952년에 설립된 “동독 각의의 국가 방송 위원회” 산하에 있었다. 국가 방송 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동독 정부의 한 기관이었으나, 실제로는 집권당인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과 그 언론 부문 집행기관인 사회주의 통일당 선동 부서의 통제를 받았다. 이 부서는 1989년 10월 19일까지 존속했다.

1968년 동독정부는 국가 방송 위원회를 국가 라디오방송 위원회와 국가 TV방송 위원회의 두가지 부문으로 나누었는데, 동독 마지막 정부인 모드로 정부는 이 두 위원회를 1989년 12월 21일 해체시켰다.

이같은 중앙집권식 방송 구조가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은 1984년 동독 TV를 위한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비밀 작업문서에 의해 입증된다. 그 문서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우리 당 지도부 및 국가 지도부가 이미 초창기에 동독에 대한 TV방송 프로그램 개발에 진로를 설정했다는 사실은 동 지도부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수단으로써의 이 방송 매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1989년 9월 30일 국가 라디오 방송 위원회는 라디오 동독 1, 라디오 동독 2라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관장했고, 이외에도 베를린 방송, 청소년라디오 (DT64), 동독의 목소리, 베를린 국제라디오 (해외라디오 방송)등 몇몇

지역 방송들이 있었다. 국가 TV방송 위원회는 동독 제 1 TV와 동독 제 2 TV프로그램을 권장했다.

1990년 1월 24일 동독 인민 의회는 검열을 철폐하는 잠정적인 방송정관을 선포했다. “동독 라디오”와 또 “독일 TV”라고 명칭이 바뀐 동독 TV 방송에 프로듀서들이 투입되었다. 이같은 동독 방송체제 개편의 법적 기초를 마련해 준 것은 통일조약 제36조였다. 동 규정의 의거 구 “동독 라디오”와 구 “동독 TV”는 이 두 방송의 과제들에 대한 관할권이 각 주들에게 주어져 있는 경우 국가와는 독립적인 법적 능력을 갖춘 공공 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동독의 주들과 동 베를린에 의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공법적인 성격을 지닌 라디오 방송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과도기간내에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갖추어야 했다. 이 과도기간의 설정과 더불어 동독주들은 한편으로는 방송 질서의 실현을 위한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개발시킬 시간을 얻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과도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통일조약 제36조 제6항 (1)에 따라 각 주들은 라디오 방송의 연방적 기준에 따라 설비를 주 정부간 공동 조약을 통해 해체시키거나 개별주 또는 몇몇주들의 공법기관에 이관시킬 가능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같은 공동 조약이 발효되지 않자, 방송 기관은 제36조 제6항 (2)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 해체되었다.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링겐 주는 중부독일 방송(MDR)으로 병합되었다. 브란덴부르크 주에는 브란덴부르크 동부독일 방송(ORB)이 설립되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는 북부독일 방송(NDR)에 병합되었다. 자유 베를린방송 (SFB)은 방송 영역을 동베를린 지역까지 확대했다.

동서독 지역 모든 주총리들은 1991년 8월 31일 통일 독일의 라디오 방송에 관한 국가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 조약은 공영 방송 및 민영 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199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이 국가조약

의 목적은 구서독 지역과 구동독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조약적 성격을 지닌 방송법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독일 모든 주들의 방송은 단일한 방송법제도를 갖게 되었다. 방송부문에 있어 독일 통일이 가져 온 또 하나의 결과는 도이치란트방송(Deutschlandfunk)과 베를린 (RIAS)방송이 DS-문화와 공동으로 새로운 전국적인 라디오 방송으로 합병된 것이다. 이 방송은 법인의 형태로 쾰른과 베를린의 ARD와 ZDF의 방송시설을 이용, 독일 전역에서 수신 가능한 두가지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할 예정이다.

2. 구 동독지역의 인쇄매체의 발전

2.1 일간지

과거 구동독에는 39개의 일간지 (31개는 지역신문, 8개는 전국지)가 있어 960만부를 발행했다. 이 신문들은 전적으로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연합 정당들, 대중 조직들 그리고 도모비나(Domowina: 소르브인의 소수민족 조직)에 의해 간행되었다(부록 Nr. 204, 동독의 39개 일간지 발행인 참조).

정치체제의 전환, 화폐 통합 그리고 독일 통일이 있자 과거 정당과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었으며 정치적으로 도구화되었던 이같은 신문 제도는 새로운 신문 시장으로 변신을 꾀하였다. 동독의 일간 신문들은 현재 총 590만부를 발행하고있다.

지역적인 구독신문은 과거 사회주의 통일당의 15개 지구신문사들의 후속 조직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약 420만부를 발행하고 있다(부록 Nr. 205,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 지구신문 참조). 이 신문들은 원칙적으로 1991년 4월에 인쇄 설비를 포함 신탁청에 의해 서독 신문사들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 총액은 11억 7,600천 마르크였다. 연방 정부는 본래 언론 정책상의 문제 및 경쟁 정책상의 문제를 감안,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신문사들이 효

울적인 편집진을 갖추고 대 지역신문으로서 독립적인 출판을 하며, 이를 통해 신문 풍토를 분권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 신문들은 분명하게 차별성을 보여 주는 독자적인 타이틀과 외관을 갖추지 않고서는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많았다.

이외에도 39개의 새로 설립된 지방 신문들이 현재 총 2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구동독 연합 정당의 3개 신문은 총 12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새로 설립된 가두판매 신문들(총 17종 125만부 발행)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했고, 현재 격심한 경쟁을 겪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고 신문, 상품 판매 신문 및 관보의 신규 설립이 있었는데, 일부는 주간지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2.2 잡지 시장

동독 잡지시장의 발전은 이에 비해 훨씬 단일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향후의 발전방향도 확실하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 잡지시장에는 대체로 이전의 제목 내지는 변형된 제목이 관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제면에서 경쟁하는 서독 잡지의 표제들은 분명 동독 독자들에게 들어맞지 않는다. 친숙하지 못한 외관, 스타일, 내용 그리고 가격은 동독소비자들의 분명한 구매 거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서독출판사 중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회사는 특별히 동독지역에 들어맞는 표제를 구상하고 동독 현지 기업과 협력을 실시한 출판사들이다.

2.3 신문 보급

동독의 신문 보급은 우체국이 독점했고, 중앙보급청(ZVA)이 이를 담당했다. 가두판매에 의한 보급은 아주 소량에 불과했다. 가두판매가 이렇게 적었던 것은 우체국에 속해 있는 몇몇 신문 판매대의 영업 시간이 짧았던 데도 기인한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는 동독지역에 있어 경쟁 중립의 신문 보급 시스템

을 확충하는데 우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방 정부와 연방 카르텔층의 협력으로 동독지역의 보급시스템을 서독 지역의 성숙한 구조에 걸맞게 확충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8개 기업과 출판업과 무관한 9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혼합형태의 보급 체제가 생겨났다. 1991년 4월부터 이 보급체제가 개별 판매와 가두 판매를 완전히 관장하고 있다.

III. 스포츠

1. 통일 이전의 상황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스포츠제도는 엘리트 체육에 우선권을 두었고, 동독은 이를 정치 선전과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이 세계적인 인정을 얻는데 악용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스포츠 분야, 특히 일반 체육 및 단체 체육 분야는 부당하게 소홀히 다루어졌다.

스포츠의 계획적인 발전은 무한한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잠재력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당지도부 및 국가지도부의 결의, 특히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가 이같은 발전을 조종했다. 또한 구동독의 독일 체조 및 스포츠협회(DTDB)와 그 산하 단체들의 조직적인 구조, 목표 설정 그리고 내용상의 과제들은 동독의 정치체제와 불가불 연관된 것들이었다.

동독 스포츠 제도에 있어 엘리트 체육 우선 정책은 주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성공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이로써 범세계적으로 “제국주의와의 계급 투쟁에 있어 사회주의의 강화(強化)에 근본적으로 기여”한다는 목적에 봉사했다. 다른 어떤 사회 분야도 이 스포츠 우선 정책만큼 동독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주의 체제의 인정에 기여한 것은 없다.

독일 통일과 더불어 동독 지역에서도 자유롭고 연방국가적인 새로운 스포츠 체제가 구축되어야 했는데, 그 근본 원칙의 하나는 스포츠의 자율성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스포츠 지원은 구동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의 원칙이라는 범위에 제한했다. 양 독일 지역의 스포츠의 협력 분야로는 다음 분야를 들 수 있다.

2. 일반 체육

통일이 있는 후 곧바로 동독 지역에는 스포츠 단체들이 설립되었는데, 건강한 대중 스포츠의 근간을 이루고 특히 명예직 형태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스포츠 단체(Sportverein)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는 또한 전쟁 이전 시기의 스포츠 단체들의 전통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작업장별 스포츠 단체들이 자유로운 스포츠 단체들로 변모했다.

스포츠 단체의 부활에 있어 동독 주민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들은 서독 지역의 스포츠 단체들, 주정부 그리고 때로는 자매 도시들로부터 재정적, 이념적 지원을 받았다. 연방 정부는 새로 생겨난 주차원의 체육협회들이 산하에 스포츠 단체들을 확충하는 작업을 지원했으며, 동독지역의 스포츠 단체 확충작업을 위한 지원으로 연방 체육협회들에 대해 1990년에서 1992년에 걸쳐 1,650만 마르크의 초기 설립 자본을 제공했다.

이 재원은 특히 동독지역의 인력 확보와 스포츠 공간 임대, 그리고 새로운 각 주별 스포츠 단체들의 시설 비용(예를 들면 사무기기등)의 충당에 도움을 주었다. 이로써 연방 재원은 동독 지역의 스포츠 단체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금으로도 사용되었다.

단체들을 통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초기에

동독의 모든 스포츠 시설을 가능하면 무료로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주의 소유로 넘겨주도록 노력했다. 1992년 10월 연방 정부가 토지할인구상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거의 모든 스포츠시설이 연방 정부나 신탁관리청에 의해 무료로 또는 아주 상징적인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에 예외로는 단지 공항과 같이 생활 체육에 사용되지 않거나 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스포츠시설들 뿐이었다. 동독의 스포츠부문의 조직정비의 정도가 아직은 서독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몇년 안에 양 지역에 조직 정비의 정도가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3. 장애인 체육

동독은 수십년간 장애인 체육을 소홀히 해왔다. 이는 장애자의 재활(再活) 스포츠는 물론 기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적 스포츠에도 해당한다. 독일 통일 이후 스포츠 단체의 구조를 완전히 변경하고 장애인 스포츠 협회 및 단체들을 설립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같은 과제들은 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연방 또는 주 차원의 장애인 체육 협회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1991년 동독의 장애인 기록향상 스포츠 선수들은 장애인 스포츠 협회에 소속되었고, 별문제없이 훈련 조치, 국제 경기 출전지명 및 독일스포츠 지원재단의 지원 대상에 통합되었다. 새로운 주차원의 스포츠 협회들은 독일 선수권 대회 및 기타 국제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동독지역 장애인 스포츠 협회들의 회원수를 보면 장애인 스포츠의 확충 작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독지역에서 실행되는 확충 작업은 연방 내무성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 통일조약 제39조에 따라 동독 지역에서의 장애인들을 위한 일반스포츠 지원의 범주속에서 연방 정부는 1991년 90만 마르크, 1992년 120만 마르크를 제공했다.

4. 선수 체육

연방내무성은 스포츠 조직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동독 지역의 선수 체육을 독일 전체 스포츠 체제에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점 과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여기에는 스포츠 단체에 대한 지원외에도 특히 선수체육을 위한 공간 건축, 훈련 시설의 확보, 엘리트 체육에 필요한 트레이너의 지속적인 고용등이 속한다. 스포츠 과학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동독 지역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 보장 문제도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연방내무성의 스포츠 예산이 두배로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부문의 이같은 통합작업은 큰 진척을 보였다(동독 지역의 선수 체육에 대한 세부적 지원내용에 관해서는 부록 Nr. 206 참조). 엘리트 선수들의 사회적 환경을 보장해줌으로써 이들 선수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는 사태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었다. 또 동독 지역에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스포츠부문의 구조를 유지하는데는 서독 스포츠 조직들과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제 9 장 독일의 국제적 역할

I. 유럽 평화질서의 구축

1. NATO·북대서양 협력회의

세계는 크게 변화였는 바, 특히 동구권에서의 변화는 눈부실 정도였다. 부실 정도였다. 1990년 11월, NATO 회원국 (16개국)과 바르샤바 회원국 (6개국) 22개국에 의한 공동성명을 통해 냉전은 끝났다. 1991년 4월, 바르샤바 조약기구 (Warschauer Paktorganisation: WPO, 영 WTO)라는 군사동맹체제는 해체되었다. 1992년 7월 10일 헬싱키에서 서명된 재래식 지상군 및 공군병력 감축에 관한 유럽 재래식 병력감축 협정 Ia (Vertrag über konventionelle Streitkräfte in Europa: VKSE 또는 KSE, 영: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에는 2+4 조약에 수용된 병력감축에 관한 독일의 일방적 의무사항이 다자간 관련사항으로 연계되었다. 유럽의 약 40,000여 무기시스템의 폐기착수는 곧 유럽대륙에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근본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로써 유럽 재래식 병력 감축 협정의 서명국은 전쟁을 방지하고 효율적 방어에 필수불가결한 군사력 만을 보유한다는 의무를 갖게 되었다.

북대서양 동맹체제는 변형과정에 있다. 필수적인 방위능력의 확보 외에도 대화와 협력이 공고한 요소로서 자리를 굳힐 것이다. 1991년 독일과 미국이 발의하여 창설된 북대서양 협력회의 (Nordatlantischer Kooperationsrat 또는 NATO-Kooperationsrat: NAKR, 영: NATO Cooperation Council)는 NATO와 구 WTO 회원국 간의 관계를 제도화하여 변화된 주변환경에 부응하도록 정치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38개 회원국을 망라하는 북대서양 협력회의는 안보정책적 공동노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벤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새로운 안보협력 동반자들에게 안보협력구조를 구축해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중유럽과 동유럽 및

CIS의 각 공화국에게 그들의 안보정책적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개혁과정이 실현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NATO와 NAKR은 UN과 CSCE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과 같은 평화유지대책을 준비하고 협력함에 있어 NATO 영역 밖에서도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안보유지와 안보조성의 모든 측면이 가장 방대하게 포괄되어야 할 새로운 유럽 안보질서의 구축은 외교정책적으로 여전히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유럽의 군사적 잠재력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속에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유럽대륙이 또 다시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학문과 기술이 발전된 결과, 국가간 통합이라는 새로운 정치형태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경제발전의 국제화를 체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유럽과 동유럽의 자유와 자결권이 실현됨에 따라 민족중심으로 되돌아 가려는 사고방식이 성행하여 기존의 국가구조가 해체되고 새로운 국가들이 형성되었다. 민족문제와 소수민족문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이상 철의 장막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은 거대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격차 때문에 통일독일 역시 새로운 책임감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은 오로지 북대서양 동맹체제와 유럽공동체에 공고히 결속되어 있을 때에만 그 외교정책이 성공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CSCE의 제도적 확충

통일독일의 외교정책은 전유럽 평화정책의 원동력이라 할 CSCE의 제도적 강화가 이룩되도록 계속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90년 11월 21일 CSCE 회원국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담에서 통과된 파리헌장은 헬싱키 후속회담의 최고 기록문서와 베를린, 프라하,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CSCE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을 통해 확대된 CSCE의 제도적 골격을

묘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 2년 마다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의 정상회담 개최
- CSCE 협의기구의 핵심적 조정수단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회동하는 CSCE 외무장관회의의 창설
- CSCE 외무장관회의의 준비 및 그 결의사항의 이행을 담당할 고위 공무원 위원회 (Ausschuß Hoher Beamter: AHB)의 창설
- 고위 공무원 위원회의 “비엔나 그룹” (1993년 초부터): 빈에 상주대표부를 두고 있는 CSCE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상설 자문·의결기관
- 의장, 의장국의 대표 (전년도 외무장관 회담 주최국)은 외무장관회의 및 고위 공무원 위원회의 이름으로 조정업무와 통신을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CSCE를 대외적으로 대표함.
- 3두체제: 현 의장 + 전임 의장 + 후임 의장
- CSCE 사무국 (프라하): 고위 공무원 위원회 및 외무장관회의를 행정적으로 지원
- 분쟁방지본부 (빈): 신뢰조성 및 안보조성 대책의 이행, 분쟁방지와 관계되는 기타 임무 수행. 협의위원회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구성) 및 사무국이 있음.
- 민주주의의 기관 및 인권을 위한 사무실 (바르샤바): 파리 현장에 따라 “자유선거 관리 사무실”로 운용됨.
- CSCE 의원 총회: 회원국 수도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는 연례회의. 코펜하겐에 사무국이 있음.
- CSCE 안보협력 포럼 (빈): 특별위원회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구성, 군비통제·군축·신뢰 조성·안보 조성에 관한 회담 및 안보상의 대화를 관장). 분쟁방지본부의 협의위원회, 양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동일인임.

- CSCE 소수민족문제 전담 고등판무관 (설립 초기 당분간)(헤이그):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 분쟁의 발생을 예방
- CSCE 사무총장 (빈): CSCE 현 의장국 대표. 행정, 회담준비, CSCE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 홍보활동, 재정
- CSCE 조정 및 중재재판소 (제네바): 의무적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
이 없는 조정,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 판결의 수락 (부록, Nr.
207 참조)

CSCE는 빈, 모스크바, 베를린, 라 발레타, 프라하, 제네바 등지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각종 전문분야에 걸쳐 상이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여러가지 통제장치를 개발한 후, 이를 받아 들였다. 그 목표는 모든 회원국들이 (예컨대 인권침해사례, 비정상적 군사활동으로 인한 우려사항 등과 같은) 중대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당사국들을 협의에 초청 또는 참여시켜 이런 사태를 CSCE 권내에서 처리되도록 다국적화 함으로써 평화적 합의달성이 용이해지도록 하거나 다른 방법의 정치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중 특히 다음과 같은 통제장치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통제장치 (CSCE 조정 및 중재재판에 앞서 조정 및 중재재판절차 - 아직 발효되지 않음. CSCE 중재위원회, 발레타 통제장치)
- 특수상황에 관한 통제장치(베를린의 긴급대책기구)
- 고위공무원 위원회 사찰단 및 보고단
- 인도적 문제에 관한 통제장치(빈, 모스크바)
- CSCE 소수민족문제 전담 고등판무관의 조기경보 성명
- 비정상적 군사활동에 대한 통제장치 (비엔나 다큐먼트 90 및 92)
(부록, Nr. 208 참조)

이로써 CSCE는 현재 밴쿠버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일한 전유럽 회의기구로서 안보협력 구조의 구축, 조기경보, 분쟁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CSCE 권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분쟁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CSCE의 분쟁예방적, 평화유지적 통제장치는 부단한 보완과 개선을 필요로 한다. CSCE는 결코 평화유지를 위한 유일한 유일한 보장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CSCE 회원국들이 CSCE 의무사항을 정치적으로 관철하여 의무사항의 준수와 적용이 보장되도록 법률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CSCE 권역내 구 공산권의 기존구조가 붕괴됨으로써 비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국가들 뿐만 아니라, 기존 민주국가들도 CSCE의 일환으로 달성해 놓은 것을 관철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독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전제조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CSCE를 위한 독일의 병력투입이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1993년 6월 15일 Dr. Wilhelm Höynck 대사가 CSCE 초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3. 유럽연합 (EU)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은 시종일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독일통일과 유럽통일은 동전의 앞과 뒤나 마찬가지로였다. 유럽공동체(EC)는 그 회원국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그 때까지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평화, 안보,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유럽공동체는 정치적 공동생활의 새로운 문화를 위해 국제적 귀감이 되었다. 유럽공동체는 자유스럽고 평화스런 가운데 독일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차대한 기여를 하였다. “통일유럽의 대등한 한 회원국으로서 국제평

화에 기여한다”는 기본법의 의무조항이 곧 독일 외교정책의 불변사항이다.

독일통일이 진행되던 중 독일과 프랑스의 발의를 배경으로 하며, 1990년 12월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의 결의에 따라 유럽공동체는 1991년 12월 9/10일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유럽수뇌이사회 (Europäischer Rat, 영: European Council)를 통해 유럽통일에 관한 조약초안에 합의하였으며, 이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 EC 회원국 외무장관·재무장관 회의에서 서명되었다. 유럽통일에 관한 조약을 통해 달성된 이러한 진전상태는 로마조약 서명 이래 가장 의미있는 변화라 하겠다.

유럽 안정공동체로서 경제·통화 동맹으로 향하는 분명한 진로가 설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성장과 고용이 꾸준히 향상되고 역내시장 구축을 위한 긴요한 보완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사회정책을 위한 11개 회원국(영국 제외)의 협정을 통해 유럽 사회동맹에의 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유럽공동체는 역내시장의 완결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회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 외에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사회·정치적 측면도 새로운 차원을 맞게 되었다. 즉 공동방위정책을 지향하는 공동 외교·안보정책의 수립을 통해 계속 발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유럽동맹 (Westeuropäische Union, WEU; 영: Western European Union)은 대서양 동맹체제의 유럽쪽 지주로서 유럽연합에 편입될 것이다. 나아가 유럽협력을 위한 제3의 지주로서 공동의 국내·사법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보조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을 조약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유럽공동체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유럽공동체의 권한을 확대·심화하는데에 또 다른 진전이 있었다. 또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유럽연합을 위한 새로운 시민권이 형성되었으며 통합구조가 성문화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의 국내 동의절차는 12개 전체 회원국에 걸쳐 완료되었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최종판결할 때까지 비준서 제출을 연기해 두고 있다. 경제·통화 동맹의 제3단계가 조기착수되기 직전인 1996년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검토회의가 열리면 모든 것이 양호

하게 발전될 것이다.

1992년 12월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유럽수뇌이사회는 독일통일을 배려하고 앞으로 유럽공동체가 확장될 것에 대비하여 유럽의회의 의원 정족수를 변경, 1994년부터 거의 모든 회원국은 기존 의석에 추가하여 더 많은 의회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독일의 의석수는 18명이 추가되어 총 99명으로 증가될 것인 바, 추가 의원들은 신연방주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다 (부록, Nr. 209 '유럽의회 의석 배분' 참조).

4. 유럽공동체의 확장

EC의 확대·강화는 앞으로 우리 회원국 모두가 직면할 도전이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가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선진국가로서 EC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강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EC 가입은 유럽통일을 향한 또 한 단계의 전진으로서 유럽경제가 지속적인 성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가입회담을 지체없이 진행시켜 1995년 1월 1일을 기해 가입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4개국은 이미 유럽 경제권역 (Europäischer Wirtschaftsraum: EWR)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가입조건 (Acquis Communautaire)의 대부분을 갖추었으므로 가입에 대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다.

EC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더불어 준가맹협정 (일명 "유럽"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는 후일 이 국가들이 EC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 국가들이 즉시 EC에 가입하는 것이 지나친 부담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EC 가입이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안

정정책적 관심사안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관한 한 우리는 이 국가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생산품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 국가들은 개혁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개혁노선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통일유럽은 확장과 동시에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적대관계로 맞서있던 세력구도에 의한 유럽의 분단은 극복되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역시 명백하다. 즉 유럽공동체와 그 회원국들이 함께 이룩해 놓은 업적을 중부 및 동유럽 인접국가들이 계속 활용하고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측이 중유럽 인접국가들과 도달한 유럽의 부담분담에 관한 합의사항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I. 통일 독일의 책임 증대

중유럽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문제해결에 있어 인구 8,000 만 명을 가진 유럽 중심부의 경제 최강국인 통일독일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은 곧 독일의 번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1.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독일

통일독일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책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독일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유럽공동체와 북대서양 동맹체제에 정착해 있는 것이 우리 독일의 지속적인 관심사인 만큼 특히 프랑스와 미국 및 기타 이 지역 우방국과의 친선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독과 프랑스는 유럽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에 관한 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독·불 관계는 유럽통일의 변함없는 추진력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대미문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

아가 프랑스는 신연방주 구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유럽통일과 자유스런 국제무역은 우리의 풍요를 약속하는 기초이다. 대서양을 넘나드는 친선관계는 단지 우리의 안보관심사안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경제적 측면에서 독일은 유럽과 미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미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간의 균형유지가 자유스런 국제무역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특히 구동독지역 재건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더욱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돈독한 동반자 관계를 한 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 있어서 미국과 독일 간의 관계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베를린 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독일 통일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소련 승계국가의 개혁과정의 성공 가능성과 도전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독일과 미국은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과거 독일외교정책의 딜렘마는 변화하는 권력구조 속에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정한 결정을 취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일이 유럽공동체와 대서양 동맹체제에 결속됨으로써 해결되었다. 9개 인접국으로 둘러 쌓인 유럽 중심부의 통일독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모든 회원국과 함께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해야 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수 차례의 외무장관 회담과 외무부 공무원의 교류를 통해 전대미문의 밀접한 공감대는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이룩될 수 있었다.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달성된 EC 내적 투명성은 곧 모든 회원국이 과거의 비밀 막료정책을 반대하고 고도의 신뢰감을 구축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대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도 예측가능성이 곧 그 주된 동기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구소련을 승계하였을뿐만 아니라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체결된 2 + 4 조약과 독·소 선린·우호·협력 조약의 당사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꾸준히 발전되고 있는 독일과 러시아 관계의 기본원칙은 양국관계 전체를 망라하는 1991년 11월 21일자 공동성명에 반영되어 있다. 소련의 절대적인 동의에 달려 있었던 독일통일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러시아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독일의 이해관계가 소진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 러시아와 독일은 장구하고 풍부한 전통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고, 러시아는 수백년간에 걸쳐 독일인들이 정착하도록 고향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2. 중·동부 유럽의 안정을 위한 지원

독일과 러시아 관계는 유럽 전체에게 중대한 의의가 있다. 모든 국가는 러시아가 착수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의 노선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신뢰스런 우방국이 될 것을 원하며 러시아의 우수한 국력이 유럽 전체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부합하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아직 풍요스런 국가는 아니지만 막강한 국가이다. 게다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인적자원 역시 각 분야에 걸친 교육수준과 함께 괄목할만한 출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가 새로운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 독일 외교정책의 변함없는 목표는 지원능력이 있는 서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러시아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은 구소련 승계국가들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이다. 독립국가연합(CIS)의 기타 소속국가에 대한 독일의 이해관계는 점점 더 공고해 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화국 외교정책의 예측가능성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공화국과 동반자로서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화국과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간의 관계는 유럽의 안정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공화국이 전략무기감축에 관한 회담(START I)에 조인하고 비핵국가로서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중대사안으로 간주한다. 1993년 6월, 독일과 우크라이나 양국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서명되었다. 백러시아, 몰다우 공화국, 그루지아 공화국에 대한 관계 역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확대되었다.

독일과 폴랜드의 관계는 2 + 4 조약의 체결을 통해 양국간 공동국경에 관한 국제법적 조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특수성을 갖게 되었다. 양국간 국경조약과 광범한 내용의 양국간 선린조약은 1992년 초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여러 조약이 발효된 이래, 독일과 폴랜드 관계는 오늘날 상당히 발전했다. 즉 양국간 선린조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활성화되어 각종 불편한 관계가 제거되고 양국관계가 크게 개선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와 폴랜드 정부 간의 접촉은 긴밀하고 신뢰에 가득 차 있다. 또한 양국 정부는 폴랜드에 있는 독일계 소수민족의 지원을 위해 공동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2년 가을, 독일이 헝가리와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방대한 내용의 우호·선린조약이 발효되었다. 독일과 구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우호·선린 조약은 1992년 12월 31일 체코슬로바키아 국가연합이 해체됨에 따라 그 승계국가인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조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었다. 이것은 독일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간의 실질적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연방정부는 독일과 폴랜드 관계의 선례에 따라 양국관계가 증대되고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승계국가인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우리와 대등한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긴밀한 독일과 헝가리 관계는 1989년 동구권 사태가 일어났을 때 헝가리가 독일과 유럽의 분단극복에 기여함으로써 특수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아가 양국관계는 조약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훌륭한 귀감이 되었다. 양국은 어느 면으로 보나 독일이 EC 회원국과 맺고 있는 우호관계에 필적할만한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헝가리의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상대국이며 양국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연방정부와 헝가리 정부는 국제문제에 관해 정기적으로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공동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국제조약으로 연계되는 국가들을 남동부 유럽으로 확대시켰다. 즉 독일은 1991년 10월 불가리아, 1992년 4월 루마니아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경제, 재정, 법률,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조약상의 협력을 통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완전한 민주국가로 발전되고 사회시장경제가 구축되도록 도와 주고 있다.

독일이 중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와 체결한 방대한 조약의 핵심은 이들 국가에게 미래지향적인 전망이 보장되도록 함이다. 이러한 조약은 각 해당 국가의 출발여건과 발전상태가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구속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각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가 조약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는 곧 유럽내에 있어서 상호협력의 중대요소이기도 하다. 독일은 폴란드, 헝가리, 구체코슬로바키아와 체결한 조약을 통해 유럽공동체 가입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이 국가들의 가입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약이 우리 독일인들에게 뜻하는 중요한 것 하나는 각 해당국에 있는 독일계 소수민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조약은 CSCE 코펜하겐 문서 등, 조약법적으로 확정된 규범과 더불어 소수민족 분야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발틱 3국에 대한 독일의 관계는 유럽의 안정에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방정부는 1939년 히틀러-스탈린 협정을 통해 발틱 3국이 소련에게 병합되어 버린 사실을 결코 인정한 바 없다. 발틱 3국은 독일과 덴마크가 발의하여 구성된 발틱해 연안국 협력기구 외무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발틱 3국과의 지역적 상호협력관계를 유럽의 지분을 안정시켜 주는 중요한 구조물로 보고 있다. 과거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에 러시아인들이 너무 많이 이주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독일 외교정책의 중대사안이기도 하다. 독일의 발틱 3국에 대한 관계는 1993년에 체결된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특히 훌륭한 자문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이 유럽 인접국과 맺고 있는 양국간 관계는 구공산권 국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개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중유럽과 동유럽의 사회정치적 발전은 과거의 경험과 새로운 경험이 교체되고 새롭게 쟁취한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통일독일의 외교정책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있던 이 지역에서 문화적 협력이 조성되도록 고도의 방법을 동원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독일 문화원 피테연구소가 중유럽과 동유럽 및 CIS 내에 많이 신설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문화가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잘 표현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1988년 동구권에서 루마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부다페스트에 피테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89년에는 소피아 그리고 1990년에는 프라하, 바르샤바, 모스크바, 크라카우, 프레쓰부르크에 피테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92년에는 리가에도 설립되었다. 1993년 중반부터 알마아타, 민스크, 키에프, 상트 페터스부르크에도 피테연구소가 설립 중이다. 1994년에는 티플리스에 피테연구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전세계에 걸쳐 독일어를 배우고 있는 2,000만명 중 약 1,300 만명이 중유럽과 동유럽 및 구소련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1993년부터 이 지역에서의 독일어 육성을 위한 특수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1989년 말부터 독일은 중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국가, 그리고 구소련에 속했던 신생독립국가(NUS)의 개혁과정을 재원과 전문적 수단이 망라된 방대한 조치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오래 전에 방법론적 여건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하여 상담·직업교육·재교육,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기술적 지원, 차관보증, 헤르메스 수출보증 및 통독 시점을 기해 발생된 구동독 대외무역 관련 청구액의 재원조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구소련 및 신생독립국가에 대해서 1989년말부터 지불

의무가 있거나 계획된 지불금액은 무려 875억 5,000만 DM에 달한다 (부록 도표 Nr. 210 참조).

나아가 독일은 구소련의 최대 채권국으로서 개혁과정의 지원에 필요한 채무변제기간 변경조치에 따라 큰 부담을 지고 있다. 1993년 4월 2일자 다자간 채무변제기간 변경합의에 따른 연방예산 부담액만도 80억 DM에 달한다.

EC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종전과 다름없이 구소련지역의 신생독립국가(NUS)에 대한 국제적 지원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EC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또한 중유럽과 동남부유럽의 여러 국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EC 회원국 전체, EC 집행위원회, 유럽 투자은행의 지원 총액의 35% (약 160억 DM)를 차지하는 최대지원국이다.

앞으로 독일지원의 중점은 자문을 통한 기술지원분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목표는 원조를 받는 국가로 하여금 경제와 사회의 구조변경이 수월해지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런 방면에서 신생독립국가 (NUS),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 지원을 위해 1993년도 연방예산에는 총 5억 1,900만 DM이 책정되어 있다.

우리는 신생독립국가 지원에 관한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신생독립국가 지원의 국제적 협력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담당 국제기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중유럽과 동유럽 여러 국가에 대한 독일의 쌍무적 지원은 EC 집행위원회가 조정한 서유럽 선진산업국 24개국의 지원활동인 G-24 에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중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와 신생독립국가의 개혁을 지원함에 있어서 선진산업국간의 공정한 “부담 분담”의 중요한 선결요건이 마련되었다. 국제지원을 조정하고 다방면에 걸쳐 경제정책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설립한 각국 합동자문단을 통해 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지원이 수월해지고 있다. 각국 합동자문단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각국 합동자문단은 뮌헨에서 개최되었던 G-7 회담시 독일의 발

의로 설립되었다.

1993년 4월 동경에서 개최된 회담을 통해 서방 7개국 (G-7) 외무장관과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개혁과정을 돕기 위한 방대한 지원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방대한 지원조치를 통해 서방측 지원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3. 동구권 거주 독일인을 위한 지원

동구권 (중동부유럽, 동유럽, 남동부유럽)에는 약 400만명의 독일인들이 살고 있다. 독일은 역사적 근거때문에 이들에 대한 특수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역대 연방정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지역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소포발송과 소규모 지원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동구권의 정치적 변혁 이후 새로운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연방 정부는 독일인으로서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현지에 머물면서 앞으로의 발전상태를 관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연방정부는 구 동구권의 여러 국가에서 지원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현지의 독일인들로 하여금 독일인으로서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해당국가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문화지원대책과 사회복지대책 외에도 경제적 지원대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지원대책은 해당국가의 부흥에 도움이 되고 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총액 약 3억 9,800만 DM이 활용되었다 (1990년 9,760만 DM, 1991년 1억 2,050만 DM, 1992년 1억 8,000만 DM). 1993년도 예산에는 1억 5,900만 DM의 지원금과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채무위임금에 대한 기타 지원금 9,200만 DM이 책정되어 있다.

초기의 지원대책이 독일인들과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한 공급상태 개선에 국한되었던 반면, 오늘날 지원대책은 점차적으로 장기적 투자조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대책은 원칙적으로 독일인이 아닌 이웃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독일인들에 대한 시기심이 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독일인들에 대한 지원조치의 수용도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지원조치는 시장경제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지원조치는 각 해당국의 정부·행정기관이 인지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수행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각종 지원은 해당국의 발전을 위한 자력구체책으로 기여하게 된다. 앞으로 소비재 지원보다 투자용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구 동구권 지역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의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고장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두 가지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민족간 이해증진의 중요한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개도국 지원정책 협력

동·서갈등이 극복됨에 따라 국제적인 개도국 지원협력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향방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대결이 끝난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국가와 공동으로 그들 나라의 문제점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본적 합의점이 도출되었다. 즉 인권이익의 지속적 신장에는 경제개혁의 추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도국의 민주적·법치국가적 정치체도가 분명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도국 발전을 위한 협력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빈곤, 환경파괴, 인구폭증, 에이즈, 마약을 비롯하여 난민사태와 이주민사태는 모든 사람들이 당면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느 일부가 다른 일부에 의존하는 오직 “하나의 세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도국 지원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국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다.

앞으로 국제적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책임지는 범세계적 개발 공동체와 책임공동체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개도국과 동구권의 발전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자신이 책임질 사안이다. 자체적 노력을 통해 국내의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기본여건을 형성하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은 개도국의 과제이다. 따라서 개도국 발전정책이란 언제나 “자력성장을 위한 지원”임은 불변사항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의 책임은 재화와 용역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개혁의지가 충만한 개도국으로 하여금 자체적 노력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국제정치적 환경변화를 개도국과의 협력에 새로이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 들였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는 빈곤 척결, 환경 보호, 지원금 배당기준의 형성과 확정 등 3대 분야이다. 지원금 개당기준의 형성과 확정을 통해 개발지원의 효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원 효과가 높아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의 지원방식과 규모가 결정된다. 이를 통해 “인권의 보호”, “주민의 정치적 결정에의 참여”, “법적 안정성”, “시장경제에 친숙한 경제·사회 질서” 및 국가활동의 발전적 지향이 실현될 경제적·정치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활동의 발전적 지향”이란 해당국 정부의 정책수립을 통해 빈곤한 사람들의 경제적·사회적 형편이 개선되고 자연생태계가 보호되며 과도한 군비지출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에 따라 개도국 지원정책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 대한 독일의 책임감이 커졌다는 사실이 인식되는 가운데 - 비록 공산주의 제도가 남겨 놓은 부담이 엄청나지만 -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기금은 계속 증액되었다.

구소련의 해체로 중앙아시아의 신생 5개 공화국이 개도국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개도국 수는 늘어났다. 이미 이러한 국가들은 기술개발지원 협력 조치로부터 완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외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몰다우가 각각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과거 개도국이었던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승계국가인 마케도니아, 크로아치아,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는 자문조치와 재영입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은 구동독이 수행한 개도국 개발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존속 여부를 평가해야 했다. 이 점에 관한 한 연방정부는 구동독이 수행하던 과거 개도국 지원대상국의 국민들에게 빈곤이 없어지고 식량이 확보되며 직업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동독이 수행하던 총 106개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72개 프로젝트는 계속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공산권이 붕괴된 이래, 각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운동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독일은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풍요로운 곳이기때문에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가 되었다. 1990년 9월 25일자 연방정부의 난민대책에는 개도국 주민의 피난동기 해소가 개도국 지원정책의 핵심적 과제라는 사실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연방정부는 피난동기 해소를 연방정부의 전체 개도국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개혁과정을 지원해주면서 주민들이 제 고향에서 생활의 희망을 갖도록 하여 더 이상 이민을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예방적 성격의 난민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 창업지원, 고용촉진, 직업훈련과 같은 대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중유럽과 동유럽의 여러 국가 (예: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슬라비아)를 비롯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마그레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귀환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와 별도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상대국들이 귀환촉진프로그램과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적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우수한 수공업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유럽차원에서의 망명비호권 일원화

독일은 1992년 중 총 438,191명의 망명비호권 신청자를 받아 들였다. 1993년도 전반기 신청자 수는 224,152명으로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할 때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2년도 망명비호권 적법 판정자는 - 법원을 통한 판결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 신청자의 10%에 훨씬 못 미친다. 연방 난민청의 행정절차를 통한 인정율은 1992년이 4.3%, 1993년 전반기가 2.1% 였다. 1991년까지 독일은 EC 전체 망명비호권 신청자의 60%를 받아 들였으며 1992년에는 거의 80%나 되었다.

망명비호권 신청자 수가 이토록 높은 가장 큰 이유는 1993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던 망명비호법 때문이었다. 이 법은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망명비호보장의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독일로 입국할 권한과 망명비호권 처리기간 중 독일에 체류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망명비호권 문제는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현재 EC의 모든 회원국은 망명비호권을 적용하여 통제불가능 상태의 이민유입사태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EC 회원국들은 유럽차원의 망명비호법과 망명비호정책의 일원화 조치에 착수하였다.

1990년 6월 19일 서명된 쉥겐 (Schengen) 추가협정을 통해 조약체결국인 프랑스, 벨지움,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독일은 각국간 내륙국경통제의 완전 철폐를 위한 조건과 균형유지조치에 합의하였다. 이탈리아 (1990년 11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각각 1991년 6월), 그리스 (1992년 11월) 역시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1990년 6월 15일 EC 회원국 이민관계부처 장관들은 더블린에서 망명비호권 신청검토에 관한 국가규정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 쉥겐 추가협정의 망명비호권 관련규정과 마찬가지로 - EC 회원국의 망명비호권 신청검토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망명비호권을 받기 위해 EC 역내에 들어 온 사람이 사증을 받고 입국했는지 입국사증 발급이 면제된 상태에서 입국했는지 역외국경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입국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연합 (Europäische Union, 약 EU; 영어: European Union)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EC가 사증정책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조약의 새로운 조항인 K 항에는 일부 분야가 공동체의 권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바, 이는 유럽연합의 실현을 내다보면서 특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특별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망명비호정책
- 회원국 외부국경 월경에 관한 규정 및 이에 부응하는 통제 수행
- 이민유입정책 및 제3국 국적 소유자에 대한 정책 (입국, 체류, 이산가족합류, 취업입국,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의 퇴치)

현재 EC 회원국 중 적극적인 이민유입정책을 펴는 국가는 없다. 그 반대로 모든 회원국은 경제, 사회,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합법적 이민유입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합류, 한시적 고용, 이미 처리과정에 처해 있는 정치적 피박해자의 수용 등은 예외이다. 이산가족 합류문제에 있어서

각국 정책의 일원화에 관한 결정이 1993년 6월 1일/2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이민유입 관계장관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2년 11월 30일 런던에서 개최된 이민유입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구유고슬라비아 출신 피난민의 임시수용에 관한 정책이 합의되었다.

독일은 약 350,000명에 달하는 구유고슬라비아 출신 피난민을 받아 들였다. 그 중 약 150,000명이 망명비호권을 신청하였다. 이들의 고향이 계속 위협스런 상태에 처해 있는 한 이들은 계속 독일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망명비호법의 신 규정에 관하여서는 부록 Nr. 211. '신 망명비호법' 참조)

6. 독일과 UN

연방정부는 UN 회원국의 동반자적 미래전략 합의가 곧 남·북 (후진국과 선진국)간 대화의 중요한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UN 총회, 1992년 2월 카타게너에서 개최된 제8차 UN 무역·개발회의(UNCTAD VIII), 1992년 6월 리오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 등 최근 수개년의 각종 UN 회의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성공적인 경제·개발·환경정책을 위한 협력과 조건이 점점 더 합의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양국 간은 물론 UN과 같은 다자간에 있어서도 정치적 관계와 개도국 지원정책으로 볼 때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곧 독일 외교정책의 핵심적 사안이다. 1993년 6월 빈에서 개최된 국제인권회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 기준의 국제 적용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냉전이 끝난 다음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UN의 의의는 점점 더 증가하였다. 앞으로 분쟁예방 분야에서 새롭고 더 많은 과제가 UN에게 부여될 것이다. 따라서 UN의 개혁이라는 주제는 매우 긴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지난날 UN의 효율성 제고문제는 독일의 대 UN 정책의 중요한 목표였다. 독일은 고액의 회비 지불국 (UN 예산 전체의 9%인 1억 3,900만 DM을 지불하는 독일은 미국, 일본 다음 세번째 고

액 지불국 임. 그 이외에 독일은 평화유지수단 또는 옵서버 임무 수행 등과 같은 특별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바, 1992년에는 2억 DM 이었음)으로서 우리 독일인들은 합리적인 비용/수익 관계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독일은 유럽 여러 국가와 함께 UN 사무국의 재편에 관한 사무총장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 바 있었다. 우리 독일은 UN과 그 산하 특수기관 간의 보다 나은 조정상태를 위해 진력하는 사무총장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발의하여 설치된 인도주의 지원 조정관의 신설은 개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우리 독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무총장이라는 기구를 강화하도록 주력해 왔다. 즉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와 병행하여 분쟁예방을 위한 독자적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1992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제출한 '평화비망록'에는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건의안이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우리 독일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평화유지군의 예방조치적 주둔 역시 필요하다는 사무총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독일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아니다. 독일은 1977년과 그 10년 후인 1987년 두 번에 걸쳐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다. 통일독일은 1995/96년도에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도록 신청서를 제출해 놓았다. 이로써 우리 통일독일은 통일 이후 UN의 일원으로서 증가된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독일은 이와같은 책임과 임무를 현재 진행 중인 안전보장이사회의 확장논의에 관계없이 계속 다할 것이다. 현행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형태는 여러모로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은 오로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한 결과로만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992년도 제47차 UN 총회에서는 다수의 회원국들이 냉전의 종식과 회원국의 증가에 따른 변화된 상황에 적합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7. 분쟁지역 관리에의 참여

독일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헌법상의 문제때문에 현재 UN이 수행하는

분쟁지역내의 작전에 연방군을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을 뿐이다.

국제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우리 독일은 앞으로 UN의 평화유지조치와 집단안보조치에 우리 독일군의 참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오늘날 독일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UN의 작전활동에 인력, 물자, 수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1989/90년도 나미비아에서 수행된 UN 작전에 독일은 처음으로 연방국경수비대원을 평화유지조치에 참여시킨 바 있다. 그 이래 연방군 병력을 포함한 독일인들이 각종 UN 작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록, Nr.212 “UN 평화유지대책에 대한 독일의 참여” 참조).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UN 회원국의 증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을 재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재편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의 행위능력과 신빙성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는 분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상임 이사국 이외에 제3의 범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논의가 활성화 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는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장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독일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결과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다.

세계가족의 일원으로서 분쟁지역 관리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통일독일에 대한 기대는 독일 외교정책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통일 직후 독일이 막대한 물질적 공급을 담당했던 걸프전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반영되었다. 유럽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독일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이다. 남동부 지역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분쟁당사국들의 행동양식은 또 다른 분쟁으로 휘말려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구소련의 각국간 분쟁과 소수민족간 분쟁은 우리 독일에겐 겉으로는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 중에는 이란과 NATO 회원국인 터키 사이의 국경지역인 나고르니 카라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이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은 구 유고슬로비아가 붕괴되기를 원하지도, 조장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연방정부는, 세르비아가 발발시킨 구유고슬라비아의 소수민족 정복 및 추방을 위한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분쟁당사국의 합의를 통한 구조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독립을 추구하려는 각 공화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독일은 자결권 행사, 무력을 통한 국경의 변경금지, 소수민족 집단의 권한 보장과 자치지역 형성 등과 같은 원칙에 따라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분쟁에 관한 EC와 CSCE 의 행동지침에 부응하는 것이다.

독일은 적대관계의 영원한 중단, 그리고 정치적 해결을 통한 합의를 위한 EC, CSCE 및 UN의 노력에 시종일관 참여해 왔다. 이와같은 것으로는 모든 분쟁지역을 망라하는 EC 감시사절단,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 분쟁지역에 대한 CSCE 장기사절단, 1992년 8월 EC와 UN의 공동회담으로 확대된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관한 EC 회담 등이 있다.

독일은 일찍부터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 대한 제재조치를 주장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벨그라드 측이 회담을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무력사용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국제전쟁법 위반사례 규명을 위한 국제 형사재판소 설치를 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도주의적인 대규모 지원을 통해 그리고 분쟁지역 피난민의 상당수를 수용하여 민간인들의 고난을 덜어주도록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독일 통일백서 (부록)

目 次

제 1 장

1. 통일조약 제12조에 입각한 합의사항 621
2.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신설 재외공관 624
3. 1990년 10월 3일자 연방국방성 장관의 일반명령 624
4. 1993년 5월 5일자 초당적 연방주의위원회에 제출한
가십지역내 연방군 주둔계획에 관한 제4차 최종보고서 625
5. 구동독 인민군의 연방군 편입 628
6.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연방군”에 대한 각종 일반문헌(발췌) ... 632

제 2 장

7. 동독의 법원 632
8. 동독의 법관, 검사, 군법무관 633
9. 동독의 군(Kreis) 법원 및 지구(Bezirk) 법원 사법보조관 633
10. 1990년도 (통일시점까지) 동독의 법규정들 634
11. 사법개혁을 위한 주제 636
12. 동·서독 법률동화를 목표로 한 법률개혁과 사법개혁..... 640
13. 재판관할권 행사의 “정상화”를 위한 과도기 현황 655
14. 신연방주의 사법률에 대한 법원(法原) 656

15.	동독 형사판결의 재심을 위한 동독수상의 행정명령	657
16.	동독 형사판결의 재심을 위한 초당위원회	659
17.	동독 형사판결의 효력정지에 관한 연방법무성의 설명서	662
18.	동독 법원의 형사판결 재심을 위한 초당위원회 (신연방주 사법행정기관에 보낸 연방법무성의 공한)	665
19.	법원의 접수 사건수 비교	667
20.	신연방주(및 베를린 일부) Kreis 법원과 Bezirk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667
21.	신연방주 사법행정 분야의 인력 보강	688
22.	사법기관(법무부 및 산하기관)의 사무실 면적	688
23.	주 사법행정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	689
24.	주 사법행정 분야의 전산화	690
25.	등기소의 현황	692
26.	신연방주의 인력 현황 및 배치 : 판사, 검사	694
27.	판사 및 검사의 자격 심사	694
28.	구연방주와 연방정부로부터 신연방주로 전보된 법조인력 일람	695
29.	연방대법원 및 연방검찰청의 통합에 따른 보직의 증가 : 판사, 검사(연방법무부 예산항목 7 및 연방노동·사회부 예산항목 11, 연방대법원을 위한 통일관련 추가 재원 예산항목 19)	695
30.	법조인 교육	696

31.	유사 사법보조관	698
32.	1990년 10월 3일 이후 법원 비서들의 임용	700
33.	신연방주의 사법보조관 및 이와 유사한 인력(사무직 포함)의 현황 및 배치(1993년 1월 1일 기준)	700
34.	사법보조관의 교육	701
35.	중급 공무원의 교육	701
36.	구동독 근무 판사와 검사의 보충교육	702
37.	구동독 판사의 보충교육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합의 (1990년/91년)	704
38.	신연방주 변호사의 수	706
39.	신연방주 공증인의 수	706
40.	신연방주 법원조직에 관한 연구	706
41.	신연방주 법원의 예상 사건 처리 부담에 관한 연구	707
42.	주(州) 법률로서 계속 발효할 구동독 법률 본문의 확정 및 수정시 연방법무성 지원	708
43.	신연방주 주(州) 공무원법의 발전 및 현황	709
44.	1992년 1월 1일 및 1993년 1월 1일 현재 신연방주의 공무원 임용 현황	712
45.	신연방주 행정을 위한 인력지원에 따른 연방 공직자 파견	713
46.	구동독지역 국경수비대 개관 : 직제 및 기능	716
47.	조직표 : 연방내무성 경찰국	717

제 3 장

- 48. 동독법원의 사형선고 및 그 집행에 관한 보고서 718
- 49. 동독공산당 제11차 전당대회 결정의 실행을 위한
동독법원의 임무 726
- 50. W 및 H의 살인죄에 관한 1992년 11월 3일자 형사판결 733
- 51. 구동독 최고재판소에 대한 정보 748
- 52. 공산주의 폭정의 희생자를 위한 명예회복 선언 769
- 53. 1992년 12월 16일자 Helmut Kohl 수상과
Boris Jelzin 대통령간의 불법피해자에 관한 공동성명 770

제 4 장

- 54. 등기소의 미결건수 현황(1993년 3월 9일 기준) 771
- 55. 신연방주 등기제도의 전산화 지원 현황(연방정부의
재정지원 보장에 관한 행정합의에 따른 경비 지원) 772
- 56.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구서독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수입 773
- 57.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구서독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지출 774
- 58.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신연방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수입 775
- 59.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신연방주 노무직, 사무직 및
광부 연금보험의 지출 776
- 60.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구서독주 노무직 및
사무직 연금보험의 예상 수입과 지출 777

61.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신연방주 노무직 및 사무직 연금보험의 예상 수입과 지출	778
62 a.	1991년도 독일전체 국민경제지수	779
62 b.	1992년도 독일전체 국민경제지수	780
62 c.	1992년도 독일전체 국민경제지수의 전년도 대비	781
63.	거주지 및 근무지별 취업자 현황	782
64.	거주지별 취업자 및 자영업자 현황	783
65.	산업분야 및 주별로 본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취업자 현황	784
66.	고용촉진법에 따른 월별 보험불입 의무자 현황	785
67.	월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현황(전체)	786
68.	월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현황(여성)	787
69.	노동시장정책적 조치(단축조업자/고용촉진대책 해당자)	788
70.	노동시장정책적 조치(재교육/조기정년퇴직)	789
71.	월별 각주의 실업자 현황	790
72.	주별 실업률 현황	791
73.	공산품의 생산자 물가지수(국내판매)	792
74.	농산품의 생산자 물가지수	793
75.	생계비에 대한 물가지수(근로자 가계 전체)	794
76.	생계비에 대한 물가지수(신연방주와 동베를린 가계중 선별)	795
77.	재래식 공법에 의한 건설 물가지수	796

78.	국민경제 지표(내국인의 임금 합계/국내 임금 합계/ 가구당 가처분 소득 및 그 중 재정이전에 의한 것)	797
79.	국민경제 지표(내국인 근로자 월임금 합계/ 근무지별 근로자 월간 임금 합계)	798
80.	월평균 소득 : 노무직 및 사무직(산업전반/건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799
81.	월평균 소득 : 노무직(산업전반/건설 이외의 산업/건설업).....	800
82.	월평균 소득 : 노무직(기초재 및 생산재 산업/투자재 산업/ 소비재 산업/식품 및 기호품 산업)	801
83.	월평균 소득 : 사무직(산업전반 : 상업, 금융·보험 포함/ 건설업 및 수공업/건설업 제외 산업/건설업)	802
84.	월평균 소득 : 사무직(기초재 및 생산재 산업/투자재 산업/ 소비재 산업/식품 및 기호품 산업)	803
85.	월평균 소득 : 사무직(도·소매업, 금융·보험업/도매업/ 소매업/금융업)	804
86.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가처분 소득 및 기타 수입/재산 및 금융자산 변동)	805
87.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소비지출/식품, 음료수, 담배)	806
88.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개인가계당 지출용도별 금전지출 (의복, 신발/주택임대료, 에너지 포함)	807
89.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가구, 기타 가재도구/교통, 통신)	808
90.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보건, 미용/교육, 여가)	809

91.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개인치장, 주거비용 및 기타/재산형성 및 대부상환 이외의 기타 지출)	810
92.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 중산 노무직 및 사무직 4인가족 기준(가처분 소득, 재산 및 금융자산 변동)	811
93.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 중산 노무직 및 사무직 4인가족 기준(개인소비/식품, 음료수, 담배)	812
94.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 중산 노무직 및 사무직 4인가족 기준(의복, 신발/ 주택임대료 및 광열비)	813
95.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 중산 노무직 및 사무직 4인가족 기준(가구, 기타 가재도구/ 교통, 통신)	814
96.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 중산 노무직 및 사무직 4인가족 기준(보건, 미용/교육, 여가) ..	815
97.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가구당 월간 수입 및 지출 : 중산 노무직 및 사무직 4인가족 기준(개인치장, 주거비용 및 기타 지출/재산형성 및 대부상환 이외의 기타 지출)	816
98.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에 대한 투자 현황	817
99.	“지역경제구조 개선” 특별사업 및 EC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투자 촉진	818
100.	“지역경제구조 개선” 특별사업 및 EC 지역개발기금을 통한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투자 촉진 (주별 제조업 및 인프라스트럭처)	819
101.	대외교역 및 내독교역(대외교역)	820

102.	대외교역 및 내독교역(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품목별 대외교역 현황	821
103.	대외교역 및 내독교역(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국가별 대외교역 현황	822
104.	대외교역 및 내독교역(내독교역 및 대외교역 비교)	823
105.	생산업의 순생산고 지수	824
106.	생산업(건설업 제외)의 순생산고 지수	825
107.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기업체(생산업 전체/전력공급, 가스공급, 원거리 난방, 급수/광산, 제조업/건설업)	826
108.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기업체(제조업)	827
109.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총계	828
110.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829
111.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기초재 및 생산재 산업	830
112.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투자재 생산업	831
113.	광업과 제조업의 수주현황 지수 : 소비재 생산업	832
114.	광업과 제조업의 순생산고 지수	833
115.	광업과 제조업의 매출고 지수	834
116.	광업과 제조업의 국내 매출고	835
117.	광업과 제조업의 대외 매출고	836
118.	광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총계	837
119.	광업과 제조업의 노무직 취업자	838

120.	광업과 제조업의 임금 총계	839
121.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매출고 총계	840
122.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대외 매출고	841
123.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총매출고 및 대외매출고 비교	842
124.	광업과 제조업의 주별 취업자수	843
125.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 총계	844
126.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 주택건설	845
127.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지상건축 ..	846
128.	건설업의 수주현황 지수 :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지하건축 ..	847
129.	건설업의 순생산고 지수	848
130.	건설업의 매출고 : 총매출고	849
131.	건설업의 매출고 : 주택건설	850
132.	건설업의 취업자 수	851
133.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총계	852
134.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주택건설	853
135.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산업용 건설	854
136.	건설업의 임금 총계	855
137.	증·개축업의 총매출고	856
138.	증·개축업의 취업자 수	857

139.	주별 건설업 취업자 수	858
140.	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859
141.	주별 및 분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주택건설	860
142.	주별 및 분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산업용건설	861
143.	주별 및 분야별 건설업에 투입된 근로시간 : 공공건설	862
144.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총계	863
145.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공업	864
146.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수공업	865
147.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상업과 요식업	866
148.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각주별 사업등록	867
149.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각주별 사업취소	868
150.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사업 등록 및 취소 : 각주별 순등록 증가	869
151.	도매업의 매출고 및 취업자 지수	870
152.	소매업의 매출고 및 취업자 지수	871
153.	전력 및 가스공급업 순생산고 지수	872
154.	전력 및 가스공급업 취업자 수	873
155.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에너지 소비	874

156.	1989년도 구동독지역 농업의 구조	875
157.	구동독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의 연도별 생산 현황	876
158.	구동독지역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실태	877
159.	풍수해로 침식된 경작지(농경지 전체에 대한 비율)	878
160.	신연방주의 농업구조 조정 지원을 받은 농장	878
161.	1991년/1992년 신연방주의 기업형태별 농업의 구조 및 실적 ..	879
162.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교통분야 주요 투자	880
163.	독일제국철도(구동독 국철)망에 대한 조치	881
164.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의 연방 장거리 도로건설 실적	882
165.	1990~1992년간 신연방주 연방 장거리 도로를 위한 각종 조치	883
166.	신연방주 화물교통 및 여객교통의 발전	884
167.	신연방주의 최대 단독 투자기업 TELEKOM의 투자 현황	885
168.	연도별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의 전화 가설	886
169.	독일연방체신청의 발전 : 서신 및 소포	887
170.	신연방주를 위한 주요 환경 지원	888
171 a	신연방주를 위한 긴급 환경 지원	889
171 b.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환경을 위한 긴급지원 (동독부흥 공동대응책)	890
172 a.	1990년초 중금속 및 유기물로 인한 동독의 지하수 오염 실태	891

172 b.	1990년초 질산염으로 인한 동독의 지하수 오염 실태	892
173.	1991년도 하천 등급 지도	893
174.	하천과 저수지의 오염 실태	894
175.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 하수처리/개인경제적 해결방안	895
176 a.	질화 암모늄에 의한 하천 오염 실태	896
176 b.	질산염에 의한 하천 오염 실태	897
176 c.	인산염에 의한 하천 오염 실태	898
176 d.	수질 오염 실태	899
177.	쓰레기 적치장의 설치 현황과 전망	900
178 a.	쓰레기 적치장의 가스처리 현황	900
178 b.	쓰레기 적치장의 오수처리 현황(지하 침투 방지)	901
178 c.	1992년도 가정 쓰레기 적치장 현황	901
178 d.	쓰레기 적치장의 기술적 처리시설	902
178 e.	향후 쓰레기 적치 수용 가능기간(1992년 기준)	902
178 f.	기초 방수시설 현황	903
179.	신연방주 도시건설 및 지역개발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904
180.	신연방주의 노동시장에 관한 기초자료	906
18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인력	907
18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재원조달	908

183.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동·서독지역 사회복지 예산 추이	909
184.	1992년 7월 1일 기준 서독지역의 연금 현황	910
185.	1992년 7월 1일 기준 동독지역의 연금 현황	911
186 a.	산업별 이산화유황가스(SO ₂)방출 현황	912
186 b.	구동독지역 산업별 이산화유황가스(SO ₂)방출 현황	913
186 c.	산업별 분진 방출 현황	914
186 d.	구동독지역 산업별 분진 배출 현황	915
186 e.	이산화유황가스 방출 연간 평균치	916
186 f.	분진 배출 연간 평균치	917
186 g.	이산화질소가스(NO ₂) 방출 연간 평균치	918
186 h.	오존 발생 연간 평균치	919
187.	Gelsenkirchen과 Leipzig의 이산화유황가스 방출 연간 평균치 비교	920
188.	유독가스에 의한 공기오염	921
189.	쓰레기 적치장 “Antonie”(Bitterfeld 소재 화학주식회사)의 단면도	922
190 a.	1990년 12월 4일자 환경보호에 관한 EC 특별규정중 독일에서 적용될 과도기 조치에 관한 이사회 의 지침	923
190 b.	1990년 12월 4일자 역내시장 환경보호에 관한 EC 특별규정중 독일에서 적용될 과도기 조치에 관한 이사회 의 지침	929
191.	신연방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제별 안내책자 및 출판물	931

192.	신연방주의 생태학적 연구대상지역(연방환경성 연구 보고, 1992년 12월 20일 기준)	934
193.	환경오염 혐의지역(1993년 1월 15일 기준)	935
194.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우려지역/임의처리/재원조달규정/ 대형프로젝트를 위한 특별규정	936
195.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 신탁청 산하기업에 대한 재원조달 규정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	937
196.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Wismut 유한책임회사의 기업정비 ..	938
197	생태학적 환경오염 처리, 갈탄 채광 정비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1997년까지 75억 DM)	939
198.	구동독지역 환경오염처리 사업을 통한 고용촉진	940
199 a.	신연방주의 14개 신설 자연보호지역	941
199 b.	독일의 국립공원(1992년 12월 31일 기준)	944
199 c.	독일의 생태보존지역(1992년 12월 31일 기준)	945
199 d.	독일의 농경보호지역(1992년 12월 31일 기준)	946

제 5 장

200	동독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947
201.	서독 교육제도의 기본구조	948
202 a.	독일 막스 프랑크 협회 소재지	950
202 b.	프라운호퍼 협회 소재지	951
202 c.	대형 연구기관 소재지	952

202 d. “청색목록”의 소재지	953
202 e, 연구·개발 관련 연방기관 소재지	954

제 6 장

203 문화부문 과도기 재원지원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955
204. 구동독의 39개 일간지 발행인	955
205. 구동독 공산당 15개 지구 신문	956
206. 1991년, 1992년, 1993년 신연방주 선수 체육을 위한 연방내무성 체육 예산	958

제 7 장

207 CSCE의 제 기구	959
208. CSCE의 메카니즘	960
209. 유럽의회, 1993년 2월 1일자 이사회 결정에 의한 의석배분 ...	961
210 a 구소련지역내 독립국가연합의 개혁과정에 대한 독일의 지원 대책	962
210 b.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동구권에 대한 독일연방정부의 지원조치(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크로아치아,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체코 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 헝가리)	964
211. 新 망명비호법	970
212. UN 평화유지 대책에 대한 독일의 참여	973

**Anhang zu den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ummer 1

Stand: 31. August 1993

Konsultationen gemäß Artikel 12 Einigungsvertrag

Land	erlosch. Verträge	Kons. beendet bzw. absch. VN	Bekanntmachung	Fundstelle BGBl II
1. Japan	3	18.12.90/VN	01.08.91	1991 S. 921
2. USA	13	22.04.91	01.08.91	• S. 928
3. UdSSR	61 + 177	03.06.91/VN	01.08.91	• S. 923
•	5		18.12.91	• S. 24
•	79	29.04.92	20.07.92	S. 585
•	4	06.07.93	16.08.93	
4. VK	17	17.04.91/VN	01.08.91	• S. 931
5. Rumänien	13	18.04.91/VN	01.08.91	• S. 929
•	32	22.05.91	28.10.91	1992 S. 114
•	5	16.09.92	18.12.92	• S. 71
6. Singapur	1	11.05.91	01.08.91	• S. 922
7. Ungarn	81	16.05.91	15.08.91	• S. 957
•	5	25.06.92	12.08.92	S. 619
8. Bulgarien	49	24.07.91/VN	02.09.91	• S. 1019
•	10	25.09.91	25.11.91	1991 S. 1151
•	6		28.08.92	S. 949
9. Niederlande	6	13.08.91/VN		
10. Finnland	10	28.06.91	02.09.91	• S. 1023
•	11	15.09.91	12.12.91	• S. 63
11. Syrien	26	24.07.91/VN	02.09.91	• S. 1002
12. Tschechosl.	83	04.04.91	23.10.91	• S. 1077
•	6	04.04.91	02.04.93	1993 S. 787
13. Belgien	22	12.08.92	21.08.92	1992 S. 964
14. Luxemburg	9	19.07.91	25.11.91	1991 S. 1150
15. Vietnam	32	19.08.91/VN	09.12.91	1992 S. 8
•	15	19.02.93	01.06.93	1993 S. 910
•	19	16.04.93	01.06.93	• S. 910
16. Laos	17	24.08.91	25.11.91	1991 S. 1148
17. Thailand	4	27.08.91	31.10.91	• S. 1128
18. China	52	09.10.91	12.12.91	1992 S. 64
19. Portugal	6	03.09.91	05.12.91	1991 S. 1431
20. Australien	8	August 91	22.10.91	1991 S. 1075
21. Schweden	19	20.09.91	09.12.91	1992 S. 10
22. Norwegen	7	17.09.91	12.12.91	• S. 68
23. Schweiz	10	Dez. 1991	19.12.91	• S. 92
24. Mexiko	11	08.11.91		
•	14	08.11.91	12.11.92	• S. 1179
25. Nicaragua	15	14.11.91	08.02.92	• S. 187
•	3	13.01.93	02.04.93	1993 S. 792
26. Kolumbien	5	15.11.91	06.02.92	1992 S. 175
27. Venezuela	4	21.11.91	06.02.92	• S. 176
28. Kuba	62	02.11.91	21.04.92	• S. 396
29. Jemen	18	08.01.91	11.06.92	• S. 456
	1055			

Land	erlosch. Verträge	Kons. beendet bzw. absch. VN	Bekanntmachung	Fundstelle BGBl. 1992 II
30. Sambia	9	01.02.92	09.03.92	S. 242
31. Tansania	13	04.02.92	26.03.92	S. 290
32. Simbabwe	12	28.02.92	19.06.92	S. 499
33. Äthiopien	25	09.02.92	19.03.92	S. 269
34. Angola	37	28.02.92	06.03.92	S. 239
35. Mosambik	48	24.03.92	04.08.92	S. 616
	3	27.04.93	19.07.93	1993 S. 1270
36. Malta	5	28.02.92	01.04.92	S. 347
37. Marokko	8	05.03.92	01.04.92	S. 348
38. Zypern	2	23.03.92	26.06.92	S. 419
39. Mongolei	36	08.04.92	09.04.92	S. 378
40. Algerien	31	06.04.92	18.04.92	S. 380
41. Spanien	8	09.04.92	18.04.92	S. 379
42. Ägypten	37	11.02.92	29.05.92	S. 451
	1	27.05.92	18.12.92	1993 S. 70
43. Griechenland	17	01.05.92	04.06.92	S. 435
44. Österreich	27	10.06.92	17.06.92	S. 497
45. Türkei	10	01.04.92	29.06.92	S. 514
46. Frankreich	14	16.06.92	02.07.92	S. 515
47. Jugoslawien	17	21.03.92	20.07.92	S. 576
48. Kanada	9	02.06.92	05.08.92	S. 603
49. Panama	3		25.08.92	S. 948
50. Belgien	22	12.08.92	21.08.92	S. 984
51. Seschellen	2	20.07.92	01.09.92	S. 1021
52. Lesotho	2		28.08.92	S. 986
53. Island	6	schriftl. Kons. beendet	28.08.92	S. 955
	1	24.09.92	28.12.92	1993 S. 134
54. Kongo	28		28.08.92	
55. Botswana	1		24.04.92	S. 383
56. Dschibouti	1			
57. Elfenbeink.	1			
58. Irland	1			
59. Jamaika	1			
60. Lichtenstein	1			
61. Malediven	1			
62. Mauritius	1			
63. Namibia	1			
64. Nauru	1			
65. Obervolta	1			
66. Ruanda	1			
67. San Marino	1			
68. Suriname	1			
69. Trinidad./Toba.	1			
70. Tschad	1			
71. Vanuatu	1			
72. Westsamoa	1			
73. Äquat. guinea	1		24.04.92	S. 383
74. Gabun	1		11.06.92	S. 499
75. Gambia	1		11.06.92	
76. Senegal	1		11.06.92	
Übertrag	1508			

Konsultationen gemäss Art. 12 Einigungsvertrag

Land	erlosch. Verträge	Kons. beendet bzw. abschl. VN	Bekanntmachung	Fundstelle BGBl. II
77. Burundi	2	19.06.92	09.09.92	1992 S. 1062
78. Nigeria	10	10.08.92	15.09.92	• S. 1063
79. Kamerun	8	08.09.92	17.09.92	• S. 1089
80. Ghana	13	14.09.92	19.10.92	• S. 1121
"	1	17.08.92	21.08.93	1993 S. 1003
81. Dänemark	15	25.11.91	15.10.92	• S. 1115
82. Benin	6	14.09.92	27.10.92	• S. 1147
83. Sierra Leone	4	09.10.92	27.10.92	• S. 1148
84. Fidschi	1	schriftl. Kons. beendet	28.10.92	• S. 1154
85. Kenia	1	"	"	"
86. Komoren	1	"	"	"
87. Nepal	2	"	"	"
88. Niger	1	"	"	"
"	1	"	05.05.93	• S. 894
89. Papua-Neug.	1	"	"	"
90. Togo	1	"	"	"
91. Philippinen	5	08.09.92	11.11.92	• S. 1178
92. Argentinien	9	14.09.92	22.12.92	• S. 132
93. El Salvador	1	07.09.92	30.12.92	• S. 137
94. Grenada	5	03.09.92	21.12.92	• S. 127
95. Bolivien	4	14.09.92	06.01.93	• S. 140
96. Sri Lanka	10	11.09.92	19.01.93	• S. 143
97. Tunesien	14	25.09.92	22.01.93	• S. 184
98. Zentr.afr. Rep.	3	07.09.92	22.01.93	• S. 175
99. Kuwait	15	24.06.92	25.01.93	• S. 189
100. Guinea	19	29.01.93	08.02.93	• S. 712
101. Mali	9	08.09.92	08.02.93	• S. 213
102. Costa Rica	2	12.08.92	06.01.93	• S. 139
103. Jordanien	5	07.09.92	06.01.93	• S. 141
104. Neuseeland	2	29.09.92	05.05.93	• S. 892
105. Italien	19	25.01.93/22.02.93	21.04.93	• S. 853
106. Uganda	7	schriftl. Kons. beendet	25.05.93	• S. 906
107. Guinea-Bissau	7	02.09.92	08.02.93	• S. 714
108. Kap-Verde	5	15.02.93	21.04.93	• S. 851
"	2	21.04.93	21.08.93	• S. 1004
109. Bangladesch	12	26.04.93	04.06.93	• S. 929
110. Polen	114	09.04.92	21.06.93	• S. 1180
111. Brasilien	8	20.11.92/26.02.93	02.04.93	• S. 850
112. Mauretanien	2	06.09.92	26.05.93	• S. 907
113. Myanmar	5	16.09.92/18.03.93	05.05.93	• S. 891
114. Uruguay	3	08.09.92/12.02.93	28.05.93	• S. 908
115. Indien	15	04.03.93	01.06.93	• S. 923
116. Madagaskar	15	31.07.92	21.04.93	• S. 852
117. Indonesien	8	21.10./04.11.92	05.05.93	• S. 898
118. Malaysia	4	14.10.92/7.4.93	05.05.93	• S. 890
119. Iran	8	20.01.93	05.05.93	• S. 899
120. Neuseeland	2	14.09.1992	05.05.93	• S. 892
121. Pakistan	7	06.06.92/20.04.93	05.05.93	• S. 893
122. Ecuador	6	03.09./16.10.92	21.06.93	• S. 1095
123. Sao Tomé	4	06.05.93	12.07.93	1993 S. 1220
124. Libanon	3	09.09.92/07.06.93	12.07.93	• S. 1260
	1935			

Nummer 2

1. September 1993

Neue Auslandsvertretungen seit 3. Oktober 1990

	Eröffnung	
Almaty	20. Oktober 1992	Botschaft
Aschgabad	ca. September 1993	Botschaft unter Leitung G.e.p.*)
Baku	17. September 199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Bischkek	17. September 199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Breslau	4. Oktober 1990	Generalkonsulat
Chisinau	31. Oktober 199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Danzig	4. Oktober 1990	Generalkonsulat
Duschanbe	10. Juni 1993	Botschaft unter Leitung G.a.i.
Eriwan	1. Dezember 1992	Botschaft unter Leitung G.a.i.
Fünfkirchen	12. November 1990	Generalkonsulat
Hermannstadt	1. April 1993	Generalkonsulat, Konsularagentur seit 28. Mai 1990
Ho-Chi-Minh-Stadt	10. April 1991	Generalkonsulat
Kiew	7. Februar 1992	Botschaft, GK seit 1. August 1989
Krakau	1. Juni 1991	Generalkonsulat
Laibach	15. Januar 1992	Botschaft, GK seit 6. November 1991
Minsk	13. März 1992	Botschaft, GK seit 4. Oktober 1990
Oppeln	8. Juli 1992	Außenstelle des GK Breslau
Phnom Penh	14. Februar 1992	Vertretung, seit 19. Juli 1991 Schutzmachtvertretung
Pjôngjang	21. Januar 1991	Schutzmachtvertretung
Preßburg	1. Januar 1993	Botschaft, GK seit 4. Oktober 1990
Riga	2. September 1991	Botschaft
Rom I. O.	9. September 1991	Ständige Vertretung
Sarajewo	geplant	Botschaft
Skopje	8. April 1992	Generalkonsulat
Stettin	4. Oktober 1990	Generalkonsulat
Tallinn	2. September 1991	Botschaft
Taschkent	6. Mai 1992	Botschaft
Tiflis	13. April 1992	Botschaft
Ulan Bator	1. November 1990	Botschaft
Wilna	2. September 1991	Botschaft
Zagreb	15. Januar 1992	Botschaft (Umwandlung aus GK)

*) = Botschaft unter Leitung eines Geschäftsträgers en pied

**) = Botschaft unter Leitung eines Geschäftsträgers ad interim

Nummer 3**Tagesbefehl des Bundesministers der Verteidigung Dr. Gerhard Stoltenberg zur Deutschen Vereinigung am 3. Oktober 1990**

Am 3. Oktober 1990 hat sich das deutsche Volk wieder in einem Staat zusammengefunden. Mauern und Grenzen sind gefallen. Mehr als vier Jahrzehnte gewaltsamer Trennung haben es nicht vermocht, das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der Deutschen zu brechen.

Die Bevölkerung der ehemaligen DDR hat mit großer Mehrheit den Beitritt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jaht und aktiv unterstützt. Damit hat sie sich für die politische Ordnung des Grundgesetzes entschlie-

den. Wir alle sind unserem Lande mit sein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und rechtsstaatlichen Verfassung verpflichtet.

Unser vereintes Deutschland ist fest in die westliche Wertegemeinschaft integriert. Wir sind Mitglied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ebenso wie der Atlantischen Allianz und der Westeuropäischen Union. Daraus ergeben sich Orientierung und Verpflichtungen auch für unsere Streitkräfte. Diese Verpflichtungen sind uns nicht aufgezwungen worden, sondern wir

haben sie freiwillig und bewußt übernommen. Sie sind ein wesentlicher Teil unseres Selbstverständnisses.

Für Deutschland einzutreten heißt heute zugleich einzutreten für Freiheit, für Demokratie, für Rechtsstaatlichkeit und für die Zusammenarbeit mit unseren Verbündeten in Europa und Nordamerika. Das bedeutet auch, auf der Grundlage der jetzt beschlossenen Verträge die Zusammenarbeit mit der Sowjetunion wie den jungen Demokratien in Mittel- und Osteuropa zu vertiefen.

Die Teilung unseres Landes ist überwunden. Nun gilt es, auch das Trennende im Denken und Empfinden zu beseitigen. Die Soldaten stehen dabei vor einer besonderen Herausforderung, sie müssen vom Gegeneinander zum Miteinander finden.

Der Abbau von Spannungen erlaubt es, Abrüstungsvereinbarungen abzuschließen und den Umfang unserer Bundeswehr zu verringern. Wir werden in wenigen Jahren 370 000 Soldaten im vereinten Deutschland haben. Dies führt zu einer Reduzierung im Westen wie im Osten Deutschlands.

Wichtige Voraussetzungen und Rahmenbedingungen für die Übernahme von Soldaten und zivilen Mitarbeitern der bisherigen NVA in die Bundeswehr sind im Einigungsvertrag vorgegeben. Viele werden diese Chance erhalten und nutzen.

Andere müssen in den kommenden Monaten nach den im Staatsvertrag festgelegten Regelungen entlas-

sen werden. Ich hoffe, daß sie nicht resignieren, sondern einen neuen Anfang machen, um am Aufbau der Wirtschaf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ktiv mitzuwirken. Soweit wir können, wollen wir diese tiefgreifende Umstellung durch Qualifizierung unterstützen. Von denjenigen, die sich für den Dienst in der Bundeswehr bewerben, erwarte ich Lernbereitschaft, bereitwillige Übernahme von Verantwortung und das offene Herangehen an neue Aufgabenstellungen. Die Soldaten der Bundeswehr fordere ich auf, die neuen Soldaten unvoreingenommen aufzunehmen, ihnen kameradschaftliche Hilfestellung zu geben und die schnelle Integration zu fördern.

Mit dem 3. Oktober habe ich die Befehls- und Kommandogewalt über die Streitkräfte des vereinten Deutschlands als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übernommen. Zugleich gilt die im Grundgesetz verankerte Wehrverfassung für ganz Deutschland.

Es kommt jetzt darauf an, den Prozeß der Integration und der Truppenreduzierung in solch einer Weise durchzuführen, daß wir nach der deutschen Einheit eine einheitliche Bundeswehr erreichen, die ihren Verfassungsauftrag im gesamten Staatsgebiet erfüllen kann.

Dazu brauchen wir die Mitarbeit der Soldaten und zivilen Mitarbeiter, nicht nur, um eine ordnungsgemäße Übergabe und Integration zu erreichen, sondern vor allem um unsere Bundeswehr der Zukunft aktiv zu gestalten.

Nummer 4

Vierter abschließender Bericht zur Stationierungsplanung der Bundeswehr im Beitrittsgebiet für die Unabhängige Föderalismuskommission vom 5. Mai 1993

Mit Datum 19. Januar 1993 hatte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der Unabhängigen Föderalismuskommission seinen Bericht zur Stationierungsplanung der Bundeswehr im Beitrittsgebiet zugeleitet. Dieser war noch auf die Stationierungsentscheidungen aus dem Jahre 1991 gegründet und konnte daher nicht vollständig sein. Am 30. März 1993 hat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über die Vorschläge zur Anpassung der Stationierungsplanung entschieden. Die Vorschläge waren zuvor am 15. Dezember 1992 und am 12. Februar 1993 den Landesregierungen und parlamentarischen Gremien zur Stellungnahme übersandt worden.

Zwei Begründungslinien hatten zur Stationierungsnachsteuerung geführt: Die Bestandsaufnahme der militärischen Infrastruktu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tailuntersuchungen und Anpassungen der militärischen Strukturen verlangten Korrektur und Komplettierung. Die veränderte Finanzsituation des Bundes hatte auch die Bundeswehr vor die Notwen-

digkeit gestellt, einen Beitrag zur Konsolidierung der Staatsfinanzen zu leisten. Die damit verbundenen finanziellen Einschnitte hatten zur Folge, daß Betrieb und investive Ausgaben konsequent nach betriebswirtschaftlichen Kriterien, orientiert am Auftrag der Bundeswehr, überprüft und daran ausgerichtet werden mußten. Die Bundeswehr im Beitrittsgebiet konnte davon nicht verschont bleiben, allerdings sind die Eingriffe so gering, daß der konzeptionelle Grundkurs hin zu einheitlicher Bundeswehr und zu ausgeglichener Dislozierung im erweiterten Hoheitsgebiet nicht angetastet wurde.

Infolge der Wiedererlangung der staatlichen Einheit und Erweiterung des Hoheitsgebietes um fünf neue Bundesländer mußte die Bundeswehr neu disloziert werden. Aufgabe und Anliegen des Bundesministers der Verteidigung war es, die zum Jahresende auf eine Friedensstärke von 370 000 Soldaten zu reduzierenden deutschen Streitkräfte und die Bundeswehrverwaltung neu zu stationieren und eine einheitliche Bundeswehr im vereinten Deutschland aufzubauen.

Dieser Bericht ersetzt den dritten Bericht vom 19. Januar 1993.

Nach den jüngsten Stationierungsentscheidungen vom 30. März 1993 sollen die 370 000 *Soldaten* zunächst mit etwa 312 000, ab dem Jahr 2005 mit letztlich etwa 304 000 Man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im Ausland disloziert sein sowie mit 58 000 bzw. ab 2005 mit knapp 66 000 Man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as heißt, 18 % der Soldaten werden künftig im Beitrittsgebiet stationiert sein. Künftige Umfangs- und Strukturveränderungen der Streitkräfte werden diese Verteilung verändern.

Die *Territoriale Wehrverwaltung* ist dem reduzierten Umfang der Streitkräfte und ihrer veränderten Dislozierung anzupassen. Für die neugeordnete Territoriale Wehrverwaltung werden nach heutigem Stand auf Dauer rund 51 000 Dienstposten in den alten und rund 11 000 Dienstpos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nötigt. Konkrete Festlegungen sind erst nach örtlichen Erhebungen, insbesondere bei den Kreiswehersatzämtern und Standortverwaltungen, möglich. Im Ergebnis wird etwa ein Fünftel der zivilen Mitarbeiter in der Territorialen Wehrverwaltung künftig im Beitrittsgebiet beschäftigt sein. Umfangsveränderungen der Streitkräfte werden sich auf die Wehrverwaltung auswirken.

Mit dem *Tage der staatlichen Vereinigung* wurde mit dem *Aufbau* einer Bundesmittelbehörde — Wehrbereichsverwaltung VII in Strausberg — und einer Höheren Kommandobehörde des Heeres — Korps- und Territorialkommando Ost bei Potsdam — begonnen. Die Aufgaben der Territorialkommando-Anteile werden zukünftig bundesweit vom Heeresführungskommando wahrgenommen. Damit wird das Korps- und Territorialkommando Ost in ein Korpskommando umgegliedert.

Zahlreiche Kommandobehörden der Streitkräfte sind bereit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gerichtet worden. Das sind

- zwei Wehrbereichs-/Divisionskommandos in Neubrandenburg und Leipzig als Ansprechpartner für die Bundesländer in militärischen Belangen,
- 15 Verteidigungsbezirkskommandos als militärische Ansprechpartner auf der mittleren allgemeinen Verwaltungsebene in den Garnisonen:
 - Erfurt, Suhl und Gera in Thüringen
 - Leipzig, Chemnitz und Dresden in Sachsen
 - Halle und Magdeburg in Sachsen-Anhalt
 - Cottbus, Potsdam und Frankfurt/Oder in Brandenburg
 - Schwerin, Neubrandenburg und Rostock (z. Z. noch Bad Doberan) in Mecklenburg-Vorpommern
 - Berlin, zugleich Standortkommando.

Im Frieden werden in ganz Deutschland Verteidigungsbezirkskommandos mit solchen Brigadekommandos der Hauptverteidigungskräfte zusammengefaßt, die am selben Standort oder in der Nähe stationiert sind. Im Beitrittsgebiet ist das vorgesehen in Erfurt, Frankenberg (bisher Chemnitz), Potsdam und Schwerin.

— Sechs Heimatschutzbrigaden in Schwerin, Eggesin, Potsdam, Weißenfels, Erfurt und Frankenberg (z. Z. noch in Dresden).

— Die Luftwaffe hat das Kommando der 5. Luftwafendivision in Strausberg eingerichtet, als endgültiger Standort ist Berlin vorgesehen.

— Die Marine ist mit dem Marinekommando Rostock als Kommandobehörde in den östlichen Landesteilen vertreten.

Zusätzlich sind an Zentralen Militärischen Bundeswehrdienststellen eine Freiwilligenannahmestelle, eine Außenstelle des Amtes für Fernmelde- und Informationssysteme der Bundeswehr und eine Gruppe des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es mit vier MAD-Stellen im Beitrittsgebiet aufgestellt worden.

Von insgesamt zehn *Bundeswehrkrankenhäusern* in der Zielstruktur sind zwei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ämlich in Berlin und Leipzig. Eines von in der Zielstruktur insgesamt vier zentralen Instituten des Sanitätsdienstes der Bundeswehr befindet sich in Berlin im Aufbau.

Die *Garnisonen* der Streitkräfte sind in allen neuen Bundesländern flächendeckend zwischen Ostsee und Erzgebirge und ostwärts bis an die Oder eingerichtet worden. Bei ihrer Festlegung im ersten Halbjahr 1991 waren auch regionale Gesichtspunkte und Erfordernisse, soweit möglich und soweit von den Landesregierungen in den Entscheidungsprozeß eingebracht, berücksichtigt worden. Zur Stationierung sind NVA-Liegenschaften genutzt worden, da sie sofort verfügbar waren. Die Liegenschaften der Westgruppe der ehemaligen sowjetischen Streitkräfte und der ehemaligen Berliner Besatzungsmächte werden erst Schritt um Schritt frei und daher nur in wenigen Ausnahmen von deutschen Streitkräften genutzt werden. In zahlreichen abgelegenen Gemeinden bis hin in den Bereich der östlichen EG-Grenze sind Standorte eingerichtet worden.

Ebenso flächendeckend wie die Streitkräftegarnisonen und ebenso flächendeckend wie im alten Bundesgebiet sind die Dienststellen und Einrichtungen der *Territorialen Wehrverwaltung, der Rechtspflege, der Militärseelsorge, der Sportförderung durch die Bundeswehr und des Rüstungsbereich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isloziert.

Hervorzuheben sind — neben der genannten Wehrbereichsverwaltung VII — besonders:

- das Wehrbereichsgebührensamt in Berlin,
- 19 Standortverwaltungen (in Bad Salzungen, Erfurt, Sondershausen, Chemnitz, Dresden, Leipzig, Halle, Beelitz, Brandenburg/Havel, Cottbus, Doberlug-Kirchhain, Potsdam, Strausberg, Eggesin, Neubrandenburg, Trollenhagen, Rostock, Schwerin und Stralsund),
- zwei Bundeswehrfachschulen in Naumburg und Neubrandenburg, eine dritte ist für Berlin vorgesehen,
- eine Außenstelle des Bundessprachenamtes in Naumburg,

- 26 Kreiswehrratsämter (in 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Stralsund, Cottbus, Eberswalde, Frankfurt/Oder, Neuruppin, Potsdam, Aschersleben, Halle, Magdeburg, Stendal, Wittenberg, Erfurt, Gera, Jena, Mühlhausen, Suhl, Bautzen, Chemnitz, Dresden, Leipzig, Zwickau und zwei in Berlin),
- vier Dienststellen der katholischen Militärseelsorge mit die Ländergrenzen übergreifenden Betreuungsbereichen: die Dienststelle des katholischen Dekans bei Korps-/Territorialkommando Ost in Potsdam mit den unterstellten Dienststellen der katholischen Militärgeistlichen in Neubrandenburg, Leipzig und Bad Frankenhausen. Eine Strukturierung der evangelischen Militärseelsorge im Beitrittsgebiet ist zur Zeit nicht möglich, da die acht ostdeutschen Landeskirchen beschlossen haben, vorerst dem Militärseelsorgevertrag nicht beizutreten,
- vier zusätzliche Sportfördergruppen der Bundeswehr, die ab 1993 um zwei weitere in den neuen Ländern ergänzt werden.

Zusätzlich zum Aufbau neuer Bundeswehrdienststellen und -truppenteile an Ort und Stelle im Osten ist vorgesehen, Dienststellen, Lehrinrichtungen und ganze Truppenteile aus den alten in die neuen Bundesländer zu verlegen. Dadurch soll eine einheitliche Bundeswehr im erweiterten Hoheitsgebiet geschaffen und zur ausgeglichenen Verteilung von Bundesinstitution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neuen Länder beigetragen werden. Die Dienststellen werden damit ihre jetzigen Standorte im Westen Deutschlands verlassen. Das sind im einzelnen:

- die Bundesakademie für Sicherheitspolitik (zentrale, höchstrangige und ressortübergreifende Fortbildungsstätte des Bundes auf dem Gebiet der Sicherheitspolitik) von Bonn nach Berlin,
- die gesamte (reduzierte) Offizierschule des Heeres von Hannover und München nach Dresden,
- die neue Marinetechnikschule, gebildet aus Schulen und Lehranteilen in acht westlichen Standorten, nach Stralsund,
- die Bundeswehrverwaltungsschule II aus Siegen nach Berlin,
- die Akademie der Bundeswehr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von Waldbröl nach Strausberg,
- das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 der Bundeswehr von München nach Strausberg,
- Anteile des Zentrums Innere Führung (dann Außenstelle) von Koblenz nach Strausberg,
- das Militärgeschichtliche Forschungsamt aus Freiburg nach Potsdam,
- das Luftwaffenmuseum aus Appen nach Berlin-Gatow,
- ein Jagdgeschwader von Sobernheim/Pferdsfeld nach Laage, Kreis Güstrow,

- ein gemischtes Lufttransportgeschwader aus Wunstorf bzw. Ahlhorn nach Holzdorf-Ost bzw. Brandis/Kreis Elbe-Elster (ehem. Herzberg),
- ein Flugabwehrraketengeschwader aus neun Standorten im Westen nach Ladeburg/Kreis Barnim (ehem. Bernau) und nach Sanitz/Kreis Rostock,
- das Marineamt von Wilhelmshaven nach Rostock,
- die Schnellbootflottille aus drei Garnisonen im Westen nach Warnemünde,
- je eine Kammer eines Truppendienstgerichts nach Potsdam (bereits vollzogen), nach Rostock und in den Raum Leipzig.

Der durch die Verlegung bedingte Aufwand und die Belastungen müssen und werden wegen übergeordneter gesamtstaatlicher Ziele getragen werden. Weitere Möglichkeiten zur Verlegung hat die Bundeswehr nicht. *)

Zu einem vollständigen Bild von in ganz Deutschland einheitlichen Streitkräften gehört neben den Truppenteilen, Dienststellen und Standorten auch die Errichtung von Truppenübungsplätzen. Der Deutsche Bundestag hat am 14. Januar 1993 in namentlicher Abstimmung mehrheitlich dem Truppenübungsplatzkonzept zugestimmt. Mit diesem Konzept ist ein faires Lastenteilungskonzept verwirklicht worden. Inzwischen mußte — infolge der Notwendigkeit, zur Konsolidierung der Staatsfinanzen beizutragen — auf die Einrichtung des Truppenübungsplatzes Wünsdorf, Krs. Spreewald-Dahme, verzichtet werden. Danach sollen in Zukunft noch zehn der früher mehr als sechzig Übungsplätz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 Bundeswehr-Truppenübungsplätzen umgestaltet werden. Desweiteren wird einer der Truppenübungsplätze Lehnin, Krs. Potsdam-Mittelmark, oder Jüterbog, Kreis Teltow-Fläming, möglicherweise dem zukünftigen Großflughafen Berlin-Brandenburg weichen müssen.

Die Bundeswehr bewirkt durch den Aufbau und die Verlegung von Dienststellen und Truppenteilen und durch die Errichtung von Truppenübungsplätzen, daß im gesamten vereinten Deutschland eine einheitliche Bundeswehr in allen Landesteilen angemessen präsent ist. Die Verwirklichung dieses Dislozierungszieles ist weit fortgeschritten. Besonders aber wird der Zeitpunkt für das Verlegen einer Dienststelle oder eines Truppenteils dadurch bestimmt, wann in der neuen Garnison die notwendige militärische Infrastruktur und ausreichend Familienwohnungen geschaffen sein werden.

*) Als Folge des Beitrages zur Konsolidierung der Staatsfinanzen mußte von drei ursprünglichen Verlegeabsichten abgesehen werden:

- Logistikschiele der Bundeswehr von Hamburg nach Niederlehme, Kreis Spreewald-Dahme (ehem. Königs Wusterhausen)
- ein Jagdgeschwader nach Falkenberg, Kreis Elbe-Elster (ehem. Herzberg)
- die BigBand der Bundeswehr von Euskirchen nach Potsdam.

Um mittelfristig bis 1995 an 55 Standorten, überwiegend Abseitsstandorten, ca. 9 300 dringend benötigte Familienwohnungen für Bundeswehrangehörige im Beitrittsgebiet zu bauen, müssen ca. 1,35 Mrd. DM an Zuschüssen des Bundes zu den Herstellungskosten eingesetzt werden. Für den Bau von rund 210 Wohnungen an drei Standorten sind ca. 70 Mio. DM für 1993 und ff eingeplant, Baubeginn ist 1993.

Am 3. Oktober 1990 wurden gemäß Artikel 21 Einigungsvertrag 2 250 von der NVA genutzte Liegenschaften aller Art in das Ressortvermögen des BMVg übertragen. Davon sollen rund 590 auf Dauer von der Bundeswehr genutzt werden. Diese sind den Landesregierungen am 6. August 1992 in Erfüllung der Protokollnotiz Nr. 12 zum Einigungsvertrag im wesentlichen benannt worden. Nach Entscheidung über das Ressortkonzept zur Stationierungsnachsteuerung vom 30. März 1993 sind ergänzende Unterrichtungen in Vorbereitung. Rund 1 250 nicht benötigte Liegenschaften sind inzwischen in das Allgemeine Grundvermögen des Bundes abgegeben worden und können anderweitig verwendet werden.

Eine Bundeswehrgarnison ist in ihrer Region ein Faktor von erheblicher wirtschaftlicher Bedeutung. Erfahrungen im alten Bundesgebiet zeigen, daß pro 100 Bundeswehrangehörige einer Garnison etwa 3 Mio. DM im Jahr in die Region fließen. Dieser Wert wird in den Standorten im Osten anfangs wegen des o. g. Baubedarfs höher liegen.

Darüber hinaus bietet die Bundeswehr qualifizierte Arbeitsplätze und Ausbildungsplätze in den verschiedenen Berufen. Von Bedeutung ist auch der erhebliche Baubedarf, der in den Kasern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geben ist.

Sämtliche Liegenschaften waren in einem sehr schlechten Zustand, insbesondere die Unterkünfte, Wirtschaftsgebäude, Heizungsanlagen.

Um hier eine Angleichung an d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vorhandenen Standard zu erreichen, werden nach gegenwärtigem Stand folgende Haushaltsmittel benötigt. Diese fließen zu einem erheblichen Teil in die mittelständische Wirtschaft der Regionen und tragen damit zum Aufbau des Handwerks und Gewerbes bei.

Bereits im Jahre 1991 wurden für

Große Baumaßnahmen	74,1 Mio. DM
Kleine Baumaßnahmen	26,1 Mio. DM
Bauunterhalt	327,6 Mio. DM
Aufschwung Ost	119,9 Mio. DM
insgesamt	547,7 Mio. DM

ausgegeben, d. h. 127,7 Mio. DM mehr als ursprünglich geplant.

Für 1992 wurden für

Große Baumaßnahmen	153,4 Mio. DM
Kleine Baumaßnahmen	26 Mio. DM
Bauunterhalt	886,9 Mio. DM
Aufschwung Ost	20 Mio. DM
insgesamt	1 086,3 Mio. DM

ausgegeben.

Damit ist es gelungen, entgegen der ursprünglichen Planung (625 Mio. DM) zusätzlich 461,2 Mio. DM in Baumaßnahmen umzusetzen. Das Ziel, mindestens 1 Mrd. DM zu verbauen, wurde deutlich übertroffen.

Für 1993 sieht die Planung insgesamt 1 125 Mio. DM vor:

Große Baumaßnahmen	650 Mio. DM
(einschließlich Wohnungsbau)	
Kleine Baumaßnahmen	25 Mio. DM
Bauunterhalt	450 Mio. DM.

Aufgrund von notwendigen Einsparungen (u. a. globale Minderausgabe, Föderales Konsolidierungsprogramm) stehen derzeit Mittel wie folgt zur Verfügung:

Große Baumaßnahmen	380 Mio. DM
(einschließlich Wohnungsbau)	
Kleine Baumaßnahmen	25 Mio. DM
Bauunterhalt	500 Mio. DM.

Trotz Haushaltsmittelansätzen von mehr als 1 Mrd. DM pro Jahr kann der Gesamtbedarf für Baumaßnahmen Ost (16 Mrd. DM) nur langfristig gedeckt werden. Deshalb sind bei Umsetzung der Infrastrukturforderungen Prioritäten zu setzen (Streckungen, Verzicht auf Maßnahmen).

Nummer 5

Integration ehemaliger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1. Konzept der personellen Integration

1. Die in dem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 Einigungsvertrag — (Anlage I Kapitel XIX Sachgebiet B Abschnitt II Nummer 2) enthaltenen soldatenrechtlichen Bestimmungen sind Grundlage für die Eingliederung ehemaliger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2. Auf Grundwehrdienstleistende wurden sofort mit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die Bestimmungen des Soldaten- und des Wehrpflichtgesetzes angewendet. Der in der Nationalen Volksarmee (NVA) geleistete Dienst rechnete voll auf den Grundwehrdienst in der Bundeswehr an. Insofern konnte aus Statussicht die Integration in diesem Personalbereich einfach gestaltet werden; Sonderregelungen waren nicht erforderlich. Längst sind alle Grundwehrdienst-

leistenden, die ihren Dienst noch in der NVA begonnen haben und nicht zwischenzeitlich freiwillig in den Streitkräften dienen, entlassen.

3. Für Zeit- und Berufssoldaten der ehemaligen NVA sieht der Einigungsvertrag die Integration in einem dreistufigen Verfahren vor:

- 1. Stufe:
Wartestand oder Weiterverwendung
- 2. Stufe:
Übernahme als Soldat auf Zeit für die Dauer von zwei Jahren (SaZ 2)
- 3. Stufe:
Übernahme in weiterführende Dienstverhältnisse

Die soldatenrechtlichen Regelungen des Einigungsvertrages sind bis zum 31. Dezember 1996 befristet.

II. Personelle Situation der ehemaligen NVA bei Inkrafttreten des Einigungsvertrages

4. Mit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am 3. Oktober 1990 übernahm der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die Verantwortung für rund 90 000 Soldaten der ehemaligen NVA. Darunter waren

- 39 000 Grundwehrdienstleistende,
- 1 000 Soldaten im Wartestand und
- 50 000 Weiterverwender.

5. Das Dienstverhältnis der Soldaten im Wartestand ruhte; sie leisteten keinen Dienst, trugen keine Uniform und hatten keine militärischen Dienstgrade. Zur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erhielten sie ein Wartegeld.

Der Wartestand war auf sechs (bei über 50jährigen Soldaten auf neun) Monate begrenzt.

6. Die Weiterverwender behielten im wesentlichen ihren früheren Status; lediglich einzelne Bestimmungen des Soldatengesetzes fanden Anwendung. Ihnen wurden vorläufige Bundeswehrdienstgrade zugeordnet; sie trugen die Uniform der Bundeswehr. Ihre Dienstbezüge richteten sich zunächst nach den am 2. Oktober 1990 gültigen Besoldungsbestimmungen der damaligen NVA; seit Juli 1991 gilt die Zweite Besoldungs-Übergangsverordnung, mit der die Systematik des Bundesbesoldungsgesetze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geführt wurde. Von den 50 000 Weiterverwendern waren

- 9 000 Stabsoffiziere,
- 15 000 sonstige Offiziere,
- 14 000 Unteroffiziere mit Portepee,
- 9 000 Unteroffiziere ohne Portepee und
- 3 000 Mannschaften.

7. Für die Weiterverwender galten besondere Entlassungsbestimmungen; etwa die Hälfte aller Weiterverwender schied aufgrund eigenen Antrages aus dem Dienst aus.

III. Übernahme als Soldat auf Zeit für die Dauer von zwei Jahren

8. Mit der Übernahme als Soldat auf Zeit für die Dauer von zwei Jahren (SaZ 2) konnte für Zeit- und Berufssoldaten der ehemaligen NVA erstmals ein Dienstverhältnis nach den Bestimmungen des Soldatengesetzes begründet werden.

Die Bewerbung zum SaZ 2 war ab 3. Oktober 1990 sowohl aus dem Wartestand als auch aus dem Weiterverwenderstatus möglich. Jeder zweite frühere NVA-Längerdienstler bewarb sich als SaZ 2; insgesamt 11 700 Offiziere, 12 300 Unteroffiziere und 1 000 Mannschaften.

9. Im Einzelplan 14 des Jahres 1991 waren insgesamt 30 000 Planstellen für die Einstellung und Übernahme von Bewerbern aus den neuen Bundesländern vorgesehen, davon 25 000 Planstellen auf Dauer und 5 000 befristet. Die Bedarfsvorgaben orientierten sich vorrangig an der Struktur der neu aufzubauenden Truppenteile und Dienststel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0. Bei der individuellen Betrachtung der Bewerber wurden die im Soldatengesetz verankerten Kriterien Eignung, Befähigung und Leistung zugrunde gelegt. Zusätzlich wurde mit der Dienstgradüberleitungsverordnung der Rahmen für die Festlegung der nunmehr endgültigen Bundeswehrdienstgrade gesetzt. Danach war im Hinblick auf die vorgesehene Verwendung ein Vergleich von Vorbildung, Ausbildung, Dienstzeiten, Laufbahnzugehörigkeit und Funktionen in der ehemaligen NVA mit entsprechenden Werdegängen der Soldaten der Bundeswehr vorzunehmen. Die Soldaten mußten außerdem Laufbahnen zugeordnet werden.

Als grundsätzliche Ausschlußkriterien galten die Mitarbeit beim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oder beim Amt für Nationale Sicherheit (AfNS) der früheren DDR, die Verwendungsreihe der Politoffiziere und die Zugehörigkeit zur militärischen Aufklärung. Erkenntnisse hierzu wie auch hinsichtlich der Verfassungstreueprüfung ergaben sich zu diesem Zeitpunkt im wesentlichen nur aus den Bewerbungsunterlagen und Selbstauskünften.

11. Die ersten Ernennungen erfolgten zum 1. Dezember 1990; bis auf wenige Nachzügler war die Übernahmeaktion im Sommer 1991 abgeschlossen.

12. Insgesamt wurden rund 18 000 ehem. NVA-Soldaten als SaZ 2 übernommen, davon rund 6 000 Offiziere, 11 200 Unteroffiziere und 800 Mannschaften. Bei den Offizieren konnte somit nur jeder 2. Bewerber berücksichtigt werden, bei den Unteroffizieren und Mannschaften hingegen rund 90%. Den jüngeren Offizieren wurde allerdings die Möglichkeit eröffnet, sich für die Unteroffizierslaufbahn zu bewerben; vor allem, wenn ihr Tätigkeitsprofil NVA eher einem Unteroffizierswerdegang Bundeswehr entsprach. Mehr als 500 Unteroffiziere mit Portepee konnten auf diese Weise gewonnen werden.

IV. Übernahme als Berufssoldat/Dienstzeitverlängerung als Soldat auf Zeit

13. Die Übernahme als Berufssoldat bzw. die Dienstzeitverlängerung als Soldat auf Zeit über zwei Jahre hinaus bildet aus Statussicht den Abschluß der personellen Integration ehemaliger NVA-Soldaten in die Bundeswehr. Auch diese Phase ist inzwischen weitgehend abgeschlossen.

14. Für Unteroffiziere ohne Portepee und Mannschaften wurde die Möglichkeit der Dienstzeitverlängerung bereits Mitte 1991 geschaffen; hierfür wurde auf Sonderbestimmungen verzichtet, es sind die Bestimmungen des Berufungserlasses — wie in den alten Bundesländern — bei einer Weiterverpflichtung anzuwenden. Die Anträge werden sukzessive nach Eingang entschieden.

15. Von den rund 3 300 Unteroffizieren ohne Portepee und den 800 Mannschaften, die als SaZ 2 übernommen wurden, haben sich insgesamt knapp 2 500 für eine Dienstzeitverlängerung beworben; das sind 61 % des IST. Davon wurden mehr als 2 400 über zwei Jahre hinaus weiterverpflichtet, das sind 96 % der Bewerber.

Die Bedarfsdeckung bei diesen Gruppen war und ist schwierig, weil es in der ehemaligen NVA kein Unteroffizierskorps gab und längerdienende Mannschaften die Ausnahme bildeten. Eine Verbesserung ist inzwischen durch die Einstellung Ungedienter und die Erstverpflichtung von Grundwehrdienstleistenden erzielt worden.

16. Für die Übernahme als Berufssoldat und die Dienstzeitverlängerung als Soldat auf Zeit von Offizieren und Unteroffizieren mit Portepee konnte nicht auf bestehende Erlasse zurückgegriffen werden. Hierfür waren besondere Bestimmungen erforderlich, die als

Richtlinien für die Dienstzeitverlängerung als Soldat auf Zeit und für die Übernahme als Berufssoldat von Angehörigen der ehemaligen NVA (BMVg — P II 1 — Az 02-06-00/5 — vom 7. Juni 1991)

bekanntgegeben wurden.

17. Die als SaZ 2 übernommenen ehemaligen NVA-Soldaten konnten sich seit dem 1. Oktober 1991 entsprechend bewerben. Diese Möglichkeit wurde von mehr als 5 600 Offizieren und knapp 7 000 Unteroffizieren mit Portepee genutzt.

18. Wesentliche Grundlage für die im II. und III. Quartal 1992 durchgeführten Auswahlkonferenzen der personalbearbeitenden Stellen waren die Sonder- und Laufbahnbeurteilungen der Bewerber, die durch ihre Truppenvorgesetzten im Februar 1992 erstellt worden waren.

19. Da zum Zeitpunkt der Auswahlkonferenzen erst für wenige Bewerber die Auskunft der Gauck-Behörde über eine eventuelle Tätigkeit für den Staatssicherheitsdienst der früheren DDR vorlag, die Sicherheitsüberprüfungen noch nicht abgeschlossen werden konnten und auch nur in Einzelfällen die ärztlichen Mitteilungen über die körperliche Eignung verfügbar waren, mußten die Auswahlergebnisse unter entsprechende Vorbehalte gestellt werden.

Bei den Auswahlkonferenzen wurden 3 575 Offiziere und 6 252 Unteroffiziere mit Portepee für weiterführende Dienstverhältnisse ausgewählt. Weitere 340 Offiziere, die zwar als Berufssoldat bzw. längerdienender Zeitsoldat grundsätzlich geeignet waren, aus Bedarfsgründen zunächst jedoch nicht fest vorgesehen werden konnten, wurden in eine „Nachrückerliste“ bzw. „Perspektivzone“ eingestellt, aus der heraus bei Ausfällen aufgrund nicht ausräumbarer Vorbehalte das Übernahmekontingent gefüllt werden soll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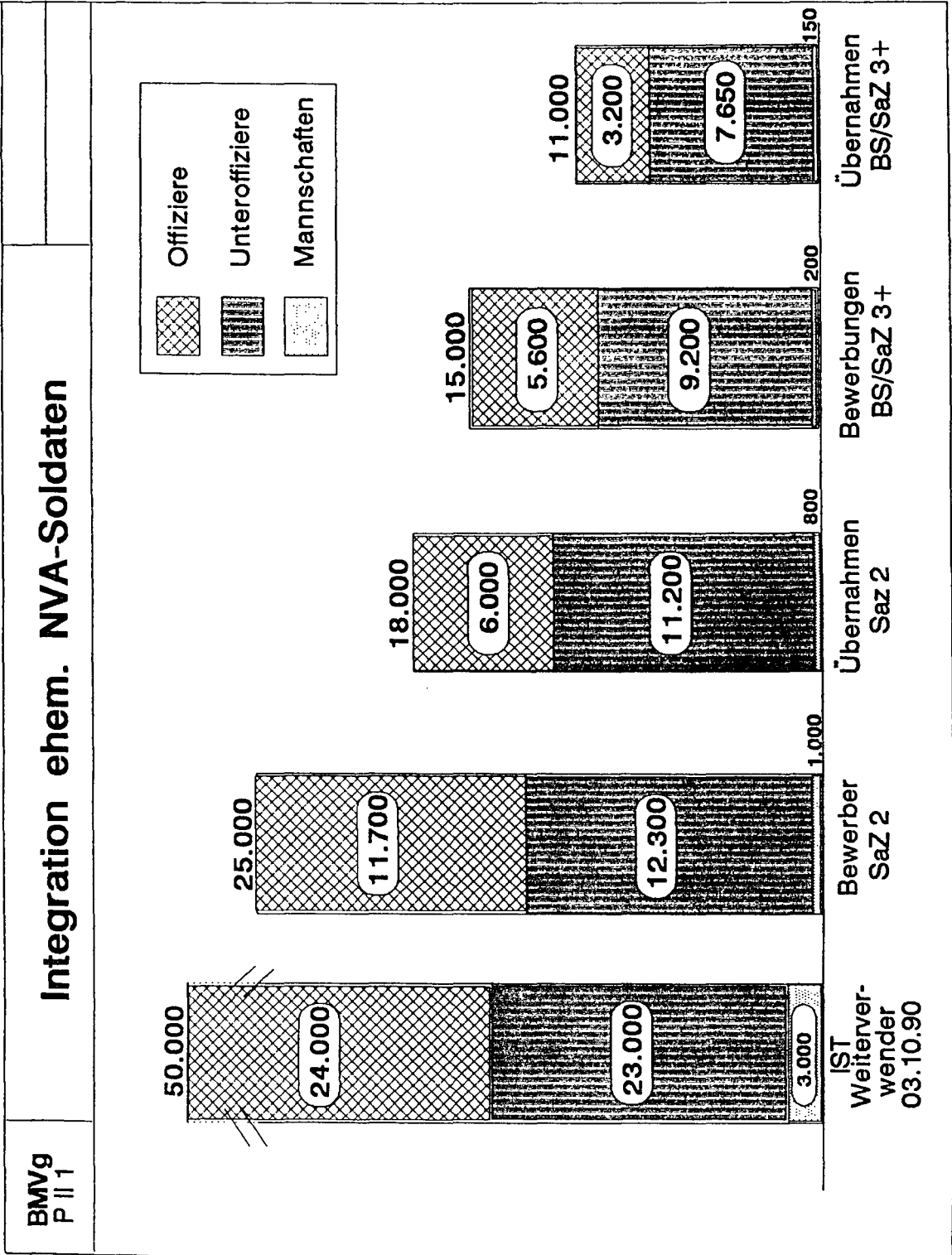
Die Soldaten wurden bis auf die als Berufssoldat vorgesehenen Offiziere, deren persönliche Eignung erst noch durch den Ausschuß Eignungsprüfung festgestellt werden mußte, unverzüglich nach den Konferenzen über das Auswahlergebnis informiert. In diesen Schreiben waren die individuell noch zutreffenden Vorbehalte aufgeführt.

20. Für rund 750 Offiziere und 950 Unteroffiziere mit Portepee, die in den Auswahlkonferenzen als Berufssoldat oder längerdienender Zeitsoldat vorgesehen worden waren, mußten die positiven Auswahlentscheidungen revidiert werden. Die Ausfallgründe sind im wesentlichen:

- Hinweise auf eine Tätigkeit für den früheren Staatssicherheitsdienst (Auskunft des 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 DDR)
- sicherheitserhebliche Hinweise
- gesundheitliche Bedenken
- Antragsrücknahme des Bewerbers aus persönlichen Gründen.

Nach Kompensation der Ausfälle aus der „Perspektivzone“ und Nachkonferenzen in einigen Bereichen konnten knapp 3 200 Offiziere und rund 5 300 Unteroffiziere mit Portepee für weiterführende Dienstverhältnisse vorgesehen werden (s. Anlage).

Mit der rechtsverbindlichen Neubestimmung der Dienstverhältnisse der Offiziere und Unteroffiziere mit Portepee ist die personelle Integration aus Statussicht abgeschlossen.



Nummer 6**Weiterführende allgemein zugängliche Literatur zu „Die Bundeswehr im Einigungsprozeß“ (Auswahl)***DIETER FARWICK (Hrsg.):*Ein Staat — eine Armee.
Report Verlag, Frankfurt, 1992*HANS PETER VON KIRCHBACH/MANFRED MEYERS/VICTOR VOGT:*Abenteuer Einheit. Zum Aufbau der Bundeswehr in den neuen Ländern.
Report Verlag, Frankfurt, 1992*VOLKER KOOP:*

Erbe NVA-Eindrücke aus ihrer Geschichte und den Tagen der Wende. 2. erweiterte Auflage 1993, Hrsg. Akademie der Bundeswehr für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Waldbröl

*JÖRG SCHÖNBOHM:*Zwei Armeen und ein Vaterland. Das Ende der Nationalen Volksarmee.
Siedler Verlag, Berlin, 1992**Nummer 7****Gerichte der DDR****Oberstes Gericht der DDR**

Bezirksgerichte	Zahl der zugehörigen Kreisgerichte
Rostock	11
Schwerin	11
Neubrandenburg	14
Potsdam	16
Frankfurt/Oder	11
Cottbus	15
Magdeburg	21
Halle	23
Erfurt	16
Gera	13
Suhl	8
Dresden	20
Leipzig	19
Karl-Marx-Stadt	25
Berlin	11
(Stadtgerichte)	(Stadtbezirksgerichte)
insgesamt 15 Bezirksgerichte	234 Kreisgerichte

Nummer 8**Richter, Staatsanwälte und Militärstaatsanwälte in der DDR**

	Richter		Staatsanwälte
	1989 ¹⁾	1990 ²⁾	1990 ²⁾
Oberstes Gericht	43 (12)	43 (12)	
Generalstaatsanwalt/DDR			119
Mecklenburg-Vorpommern	186	188	
— Bezirksgericht	43 (20)	38	
— Kreisgericht	143 (72)	150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159
Brandenburg	251	267	
— Bezirksgericht	56 (27)	50	
— Kreisgericht	195 (94)	217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185
Sachsen-Anhalt	249	252	
— Bezirksgericht	48 (21)	40	
— Kreisgericht	201 (106)	212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205
Sachsen	374	397	
— Bezirksgericht	81 (34)	73	
— Kreisgericht	293 (157)	324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275
Thüringen	190	205	
— Bezirksgericht	45 (23)	42	
— Kreisgericht	145 (63)	163	
— Bezirks-/Kreisstaatsanwaltschaften			161
Berlin-Ost	162	193	
— Stadtgericht	28 (19)	40	
— Stadtbezirksgericht	134 (92)	153	
— Generalstaatsanwaltschaft/Berlin/ Stadtbezirksstaatsanwaltschaften			132
Militärgerichte	35	35	
Militärstaatsanwaltschaften			80
insgesamt	1 490	1 580	1 316
— Bezirksgericht	301 (144)	283	
— Kreisgericht	1 111 (584)	1 219	

() = davon Frauen

¹⁾ = Stand 31. Dezember 1989²⁾ = Stand 1. Juli 1990**Nummer 9****Sekretäre der Kreisgerichte/Bezirksgerichte in der DDR**

	1	2	3
	Bezirksgerichte	Kreisgerichte	1 + 2
Berlin-Ost	7	119	126
Mecklenburg-Vorpommern	6	134	140
Brandenburg	7	174	181
Sachsen-Anhalt	5	194	199
Sachsen	7	278	285
Thüringen	6	136	142
gesamt	38	1 035	1 073

Stand: 1. Juli 1990

Die Sekretäre der Kreis- und Bezirksgerichte nahmen die ihnen durch Gesetz und andere Rechtsvorschriften zugewiesenen gerichtlichen Aufgaben wahr. An jedem Kreis- und Bezirksgericht gab es einen leitenden Sekretär, der darüber hinaus für die Durchsetzung der ihm übertragenen materiellen, finanziellen und technisch-organisatorischen Aufgaben verantwortlich war und die nachgeordneten Sekretäre und weitere ihm unterstellte Mitarbeiter anleitete (§§ 27, 35 GVG/DDR).

Der Aufgabenbereich der Sekretäre der Kreis-/Bezirksgerichte entsprach teilweise denen des Rechtspflegers, des Urkundsbeamten der Geschäftsstelle und des Gerichtsvollziehers.

Den Sekretären oblag u. a.

- die Aufnahme von Klagen, Rechtsmitteln und sonstigen Anträgen in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sachen zu Protokoll der Rechtsanwaltsstelle (§ 11 Abs. 1 ZPO/DDR),

- die Entscheidung über den Erlaß gerichtlicher Zahlungsaufforderungen (§ 15 Abs. 1 ZPO/DDR) — vergleichbar dem Mahnverfahren —

- die Durchführung des Aufgebots- und des Todeserklärungsverfahrens (§§ 136 Abs. 2, 144 Abs. 2 ZPO/DDR),

- die abschließende Bearbeitung der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sachen (Kostenberechnung, Kostenfestsetzung, Rechtskraftvermerke, Aktenverwahrung),

- die Schlußverfügung und Einleitung der Strafenverwirklichung in Strafverfahren (§ 340 StPO/DDR, §§ 1 ff. 1. DB zur StPO/DDR),

- die Vollstreckung rechtskräftiger Vollstreckungstitel auf Antrag des Gläubigers (§ 88 Abs. 1 ZPO/DDR).

Nummer 10

Rechtsvorschriften der DDR, die Rechtspflege betreffend, aus dem Jahre 1990 (bis zum Beitritt)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und die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 eigener Praxis vom 22. Februar 1990 (GBl. I Nr. 17 S. 147)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vom 15. März 1990 (GBl. I Nr. 18 S. 171)

Anordnung über die Gebühren in Registersachen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 Gebührenanordnung — vom 19. März 1990 (GBl. I Nr. 20 S. 184)

Anordnung über Büros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r Rechtsanwälte vom 17. April 1990 (GBl. I Nr. 25 S. 241)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 Zulassung von Justitiaren mit eigener Praxis — vom 18. April 1990 (GBl. I Nr. 25 S. 239)

Zwei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Justitiar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Justitiar-Verordnung) — Justitiar-Gebührenanordnung — vom 18. April 1990 (GBl. I Nr. 25 S. 240)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Verlängerung der Wahlperiode der Schöffen der Kreisgerichte und Mitglieder der Schiedskommissionen vom 26. April 1990 (GBl. I Nr. 25 S. 239)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 Bildung von Kreisgerichten in Großstädten

mit Stadtbezirken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3)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 Umgestaltung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4)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 Gesamtvollstreckungsverordnung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5)

Verordnung über die Vollstreckung in Grundstücke — Grundstücksvollstreckungsverordnung — vom 6. Juni 1990 (GBl. I Nr. 32 S. 288)

Anordnung über die Tätig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Patentanwäl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7. Juni 1990 (GBl. I Nr. 41 S. 625)

Anordnung über die Tätig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Rechtsanwält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7. Juni 1990 (GBl. I Nr. 42 S. 664)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Verlängerung der Wahlperiode von Richtern und Schöffen vom 8. Juni 1990 (GBl. I Nr. 32 S. 283)

Anordnung über die Änderung der Anordnung über die Gebühren für die Tätigkeit der Rechtsanwälte — Rechtsanwaltsgebührenanordnung (RAGO) — vom 14. Juni 1990 (GBl. I Nr. 42 S. 666)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vom 20. Juni 1990 (GBl. I Nr. 37 S. 475, Nr. 54 S. 1152)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1. Juni 1990 (GBl. I Nr. 34 S. 357, Nr. 44 S. 713)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vom 22. März 1984 zur Bekämpfung der Ordnungswidrigkeiten — OWVO — (GBl. I Nr. 14 S. 173) i. d. F. der Verordnung vom 14. Dezember 1988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Ersten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Einführungsgesetz zum StGB — Verfolgung von Verfehlungen — und der Verordnung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OWVO — (Änderungsverordnung) (GBl. I Nr. 29 S. 347) vom 27. Juni 1990 (GBl. I Nr. 39 S. 542)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ordnung,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Strafgesetzbuch und zur Strafprozeßordnung,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des Strafregistergesetzes, des Strafvollzugsgesetzes und des Paßgesetzes (6. Strafrechtsänderungsgesetz) vom 29. Juni 1990 (GBl. I Nr. 39 S. 526)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Zivilprozeßordnung vom 29. Juni 1990 (GBl. I Nr. 40 S. 547)

Gesetz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 GNV — vom 29. Juni 1990 (GBl. I Nr. 41 S. 595)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Gesetz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mit Freiheitsentzug — Strafvollzugsgesetz — vom 7. April 1977 vom 3. Juli 1990 (GBl. I Nr. 55 S. 1241)

Verfassungs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4)

Verfassungs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setzes über die Staatsanwaltschaf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5)

Richtergesetz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7)

Verordnung zur Anwendung von Rechtsvorschriften vom 11. Juli 1990 (GBl. I Nr. 44 S. 713)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 Neufestlegung der Zuständigkeit für Entscheidungen in Militärstrafsachen — vom 18. Juli 1990 (GBl. I Nr. 46 S. 811)

Gesetz zur Änderung des Familiengesetzbuche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stes Familienrechtsänderungsgesetz) vom 20. Juli 1990 (GBl. I Nr. 52 S. 1038)

Beschluß der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m Richtergesetz — 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schüsse — vom 22. Juli 1990 (GBl. I Nr. 49 S. 904)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Rechtsvorschrif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über das Zugabewesen und über Preisnachlässe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Juli 1990 (GBl. I Nr. 51 S. 991)

Zweite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 vom 25. Juli 1990 (GBl. I Nr. 45 S. 782)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Verordnung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31. Juli 1990 (GBl. I Nr. 54 S. 1152)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Richtergesetz — Disziplinarordnung — vom 1. August 1990 (GBl. I Nr. 52 S. 1061)

Durchführungsbestimmung zur Zivilprozeßordnung vom 9. August 1990 (GBl. I Nr. 55 S. 1249)

Ers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Richtergesetz vom 14. August 1990 (GBl. I Nr. 56 S. 1267)

Anordnung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Anordnung über die Tätigkeit der Rechtsanwälte — Rechtsanwaltsgebührenordnung (RAGO) — vom 15. August 1990 (GBl. I Nr. 56 S. 1293)

Anordnung zur Änderung der Anordnung über Büros außerhalb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elassener Rechtsanwälte vom 15. August 1990 (GBl. I Nr. 56 S. 1295)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nach dem Rechtsberatungsgeset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gelassener Erlaubnisinhaber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6 S. 1261)

Verordnung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7 S. 1328)

Verordnung über die Dienstordnung der Notare (DONot) vom 22. August 1990 (GBl. I Nr. 57 S. 1332)

Zweite Durchführungsbestimmung zum Richtergesetz — Ordnung zur Wahl und Berufung ehrenamtlicher Richter — vom 1. September 1990 (GBl. I Nr. 62 S. 1553)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von Studenten, die vor dem 1. September 1990 an den juristischen Sektionen der Universität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matrikuliert worden sind, vom 5. September 1990 (GBl. I Nr. 59 S. 1436)

Rehabilitierungsgesetz vom 6. September 1990 (GBl. I Nr. 60 S. 1459)

Rechtsanwaltsgesetz vom 13. September 1990 (GBl. I Nr. 61 S. 1504)

Gesetz über die Schiedsstellen in den Gemeinden vom 13. September 1990 (GBl. I Nr. 61 S. 1527)

Nummer 11

Thesen zur Justizreform

Die Thesen wurden von einer vor allem aus Juristen des Ministeriums der Justiz bestehenden Arbeitsgruppe mit den Mitgliedern Dr. Ronald Brachmann, Adelheid Brandt, Lothar Habermann, Dr. Peter Lehmann, Wolfram Marx, Ernst-Günter Severin, Dr. Gerd Teichler, Dr. Frank Thiele, Matthias Treffkorn und Heiko Wagner erarbeitet. Sie sind ein Diskussionsangebot und erheben keinen Anspruch auf Vollständigkeit.

In unserem Land vollziehen sich tiefgreifende, radikale Veränderungen, in deren Zentrum eine umfassende Reform des politischen Systems der DDR steht. Diese Revolution kann nicht erfolgreich sein, wenn sie nicht auch die Justiz ergreift und erneuert. Überall ist das Bemühen der an der revolutionären Erneuerung der Gesellschaft interessierten Kräfte spürbar, die Ursachen der Deformationen der bisherigen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aufzudecken und daraus die dringend notwendigen Konsequenzen zu ziehen. Dieser Aufgabe muß sich auch die Justiz stellen.

Neue politische, staatliche und wirtschaftliche Strukturen und Wegrichtungen werden mit Notwendigkeit Auswirkungen auf die Justiz, deren Aufgaben und Organisation haben. Gefordert ist eine tragfähige Konzeption über die zur strikten Gewährleistung von Rechtsstaatlichkeit und Rechtssicherheit und zur Angleichung der Rechtsordnungen beider deutscher Staaten zu vollziehenden Veränderungen. Eine solche Konzeption setzt voraus, zu erkennen, welche Rolle die Justiz bislang in unserem Land eingenommen, inwieweit sie zur entstandenen gesellschaftlichen Krise und zur Herausbildung einer deformierten, zentralistisch-administrativ geleiteten Gesellschaft beigetragen hat. Darauf aufbauend sind die notwendigen Schlußfolgerungen für eine schrittweise durchzuführende, alle Bereiche der Rechtspflege erfassende Justizreform zu ziehen.

Wirken der Justizorgane im bisherigen Staatssystem

1. Gegenwärtig sich häufende Erscheinungen, daß Mitarbeiter der Justizorgane diffamiert und beleidigt, ja auch Drohungen und Angriffen ausgesetzt werden, sind keine geeignete Reaktion auf die durchaus differenziert einzuschätzende Justizentwicklung. Ebenso wie es unrichtig ist, die Rechtsordnung der DDR global mit Unrecht gleichzusetzen, so falsch ist es auch, der Justiz permanenten Rechtsbruch zu unterstellen. Die Justizorgane erfüllten den ihnen durch die geltende Verfassung zugewiesenen Auftrag, der Einhaltung der Gesetzmäßigkeit und dem Schutz der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zu dienen sowie die Freiheit, das friedliche Leben, die Rechte und Würde der Menschen zu schützen. Im Rahmen dieses Verfassungsauftrags haben Staatsanwaltschaft, Gerichte und Staatliche Notariate weit überwiegend nach bestem Wissen und Gewissen unvoreingenommen auf der Grundlage der gelten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gehandelt und entschieden, wurden die weitaus meisten Verfahren nach rechtsstaatlichen Prinzipien durchgeführt und blieben frei von Einflüssen und Vorgaben Dritter. Das betrifft nicht nur die Klärung von Rechtsstreitigkeiten und Rechtsangelegenheiten auf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lichem Gebiet, sondern auch die Aufdeckung und Ahndung von Straftaten der allgemeinen Kriminalität.

2. Allerdings kam es in der Vergangenheit im Bereich der Justiz auch dazu, daß Recht und Rechtsprechung zur Durchsetzung einer von einem falschen Sicherheitsverständnis getragenen Machtdoktrin mißbraucht wurden. Durch Verletzung demokratischer Prinzipien der Gesetzgebung kamen auch auf justiziellem Gebiet Gesetze bzw. einzelne Normen zustande, die nicht oder unzureichend dem Willen des Volkes entsprachen. Vorherige Beschlussfassung im Politbüro der SED bestimmte entscheidend den Inhalt von Gesetzen, und ihre Verabschiedung durch die oberste Volksvertretung, die ihrer verfassungsmäßigen Funktion nicht gerecht wurde, oblie formalen Zustimmungssakt. Es entstanden auf diese Weise Ge-

setze, die den alleinigen Machtanspruch der früheren Partei- und Staatsführung juristisch ausformten und gegen deren Sicherheitsvorstellungen gerichtete Handlungen kriminalisierten. Das schuf den Boden dafür, daß durch die Justiz im Bereich des politischen Strafrechts — aber nicht nur dort — auch Entscheidungen getroffen wurden, die, obwohl von den Gerichten „Im Namen des Volkes“ verkündet, dem Rechts- und Gerechtigkeitsempfinden des Volkes nicht entsprachen.

3. Die Justiz, die bisher als Bestandteil der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Staatsmacht galt und wirkte, war keineswegs frei von stalinistischen Denk- und Organisationsstrukturen, sondern eingebunden in die zentralistisch-administrative Ausformung der Gesellschaft. Auch bei den Gerichten wurde ein zentralistisches Leitungssystem aufgebaut, das Eingriffe in die Rechtsprechung ermöglichte.

Durch „Gemeinsame Standpunkte“ der zentralen Justizorgane wurden Orientierungen für die Rechtsanwendung vorgegeben, die de facto als verbindliche Grundlage wirkten. Um gegen politisch Andersdenkende vorgehen zu können, wurden geltende rechtliche Regelungen tendenziell unter dem Eindruck politischer Ereignisse ausgelegt und ausgehöhlt. Durch Anleitungen der zentralen Justizorgane wurde dafür Sorge getragen, daß die nachgeordneten Rechtspflegeorgane einem zentral vorgegebenen Willen folgten und das Recht in diesem Sinne anwandten. Unter Verletzung der Unabhängigkeit der Richter wurde in politisch sensiblen Angelegenheiten auf einzelne Verfahren Einfluß genommen, der mitunter bis hin zur konkreten Anleitung über die zu treffende Entscheidung reichte. Auch glaubten manche Funktionäre territorialer Partei- und Staatsorgane, sich in die Rechtsprechung einmischen zu können. Derartige Strukturen und Mechanismen und die Ursachen für ihre Ausbreitung müssen mit aller Konsequenz beseitigt und ihre Restauration verhindert werden.

4. So wie es falsch ist, für Fehlentwicklungen in der Justiz alle in diesem Bereich Tätigen verantwortlich zu machen und pauschal zu verurteilen, so haltlos ist aber auch die Position, die Richter, Staatsanwälte und Notare aller Ebenen trafe überhaupt keine Verantwortung, da sie ja „nur“ — wie es ihr Auftrag ist — geltende Gesetze, die sie nicht gemacht haben, angewandt hätten. Eine solche Position läßt das Spannungsfeld zwischen Rechtsnorm und Rechtsanwendungsakt unberücksichtigt und verkennet, daß dem Gesetz eben nur im seltensten Fall unmittelbar das Ergebnis der Beurteilung eines konkreten Sachverhalts entnommen werden kann, sondern vielmehr entscheidend ist, was man im Wege der — vor allem bei der Anwendung des politischen Strafrechts (2. und 8. Kapitel des StGB) verbindlich vorgegebenen — Auslegung aus dem Gesetz herausliest oder hineininterpretiert. Und in diesem Spannungsverhältnis hat es Erscheinungen gegeben, die das Recht deformierten und für die die Verantwortung übernommen werden muß. Will die Justiz den Erneuerungsprozeß glaubhaft vollziehen, bedarf es deshalb, vor allem in Leitungsfunktionen, auch differenziert personeller Veränderungen.

Stellenwert der Justiz als Dritter Gewalt

Um der Justiz den ihr in ein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gebührenden Platz zuzuweisen, wird im Rahmen der Justizreform die Lösung folgender Aufgaben für erforderlich gehalten, wobei alle angestrebten Veränderungen nur im engen Zusammenhang mit anderen notwendigen Reformen, insbesondere der Verwaltungsreform (Länderstruktur) und Wirtschaftsreform, und als Bestandteil einer längerfristigen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gesehen und verwirklicht werden können.

1. Der Justiz ist als Dritter Gewalt im System funktions-tätiger Machtausübung ein prinzipiell neuer Stellenwert einzuräumen, der ihr ein eigenständiges, von anderen staatlichen Gewalten getrenntes Agieren ermöglicht. Unter Wahrung der Dominanz der Volksvertretungen sind Legislative, Exekutive und Jurisdiktion als voneinander getrennte Träger der Staatsmacht zu begreifen und zu organisieren, um künftig zentralistisch-administrative Strukturen und Machtmißbrauch zu

verhindern, die Freiheit des einzelnen und wirkliche Volksherrschaft zu garantieren.

Eine neue Verfassung unseres Landes darf sich deshalb nicht nur allein zur Volkssouveränität, sondern muß sich zu ihrer Sicherung zugleich zu Rechtsstaatlichkeit und zu dem damit verbundenen Prinzip der Gewaltenteilung bekennen. Sie sollte jeder Gewalt ihren spezifischen Platz und ihre Grenzen zuweisen.

2. Der Dritten, im Kern rechtsprechenden Gewalt fällt die Aufgabe zu, die Einhaltung von Recht und Gesetz für jedermann zu gewährleisten und die Freiheitsphäre des einzelnen auch vor Übergriffen des Staates zu schützen. Ausgangs- und Zielpunkt ihrer Tätigkeit ist der Schutz der verfassungsmäßig garantierten, zum Allgemeingut des Menschheitsfortschritts gewordenen Grund- und Menschenrechte. Diese sind durchweg als subjektive Rechte, d. h. auch gerichtlich einklagbare Rechte auszugestalten, um sie von ihrer bisherigen ideologischen und politischen Hülle zu befreien. Notwendig ist die Schaffung einer verfassungsmäßigen Garantie, die dem Bürger einen möglichst lückenlosen gerichtlichen Rechtsschutz gegen jegliche Verletzung seiner Rechte sichert (Rechtsweggarantie). Gerichtlicher Rechtsschutz kann sich künftig nicht mehr nur auf straf-,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liche Angelegenheiten konzentrieren, sondern muß sich auf alle rechtlich geregelten Bereiche erstrecken. Der Bürger muß in ihm betreffende Rechtsangelegenheiten das Recht haben, ein Gericht als unabhängige, an der Sache selbst nicht beteiligte und nur an Recht und Gesetz gebundene Instanz anrufen zu können.

Dem Gericht als einzig rechtsprechendem Organ gebührt es, in allen umstrittenen Rechtsangelegenheiten das letzte Wort zu sprechen; d. h., gegen jede durch nichtrichterliche Organe getroffene Entscheidung und Maßnahme muß die Möglichkeit der Überprüfung durch ein Gericht bestehen, das die Angelegenheit in tatsächlicher und rechtlicher Hinsicht prüft und für die Beteiligten verbindlich entscheidet. Dieser Position folgend sind künftig alle jene Rechtsangelegenheiten der Jurisdiktion zuzuführen, die bisher von einem der Beteiligten selbst (wie derzeit die übergroße Mehrzahl der Streitfälle mit Verwaltungsorganen) oder von Dritten, jedoch nichtrichterlichen Organen (wie z. B.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 Streitigkeiten durch Beschwerdekommisionen) endgültig entschieden werden.

Die Gewährung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in allen Rechtsangelegenheiten erfordert, ein funktionsfähiges Gerichtssystem zu errichten und die Gerichte personell und materiell derart auszustatten, daß sie die zusätzlichen Rechtsprechungsaufgaben in vollem Umfang und in angemessener Zeit zu erfüllen in der Lage sind. Das bestehende Gerichtssystem in seiner zeitigen Organisation, Struktur und Personalstärke besitzt hierfür nicht die Voraussetzungen.

3. Durch ein neues Gerichtsverfassungsgesetz sind Stellung, Aufgaben, Organisation und Zuständigkeit der Gerichte neu zu bestimmen.

Zunächst werden die mit einer schrittweisen Erweiterung des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zusätzlich entstandenen Aufgaben der Rechtsprechung den ordentlichen Gerichten zugeordnet werden müssen. Für die Einrichtung weiterer Gerichtszweige bestehen u. E. jetzt und in absehbarer Zeit keine Voraussetzungen. Die Entwicklung wird aber dazu führen müssen, für die einzelnen Sachgebiete nebe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spezielle, eigenständige Gerichtsbarkeiten zu schaffen, wie Verwaltungs-, Arbeits-, Sozial- und Finanzgerichtsbarkeit. Die Verteilung der rechtsprechenden Gewalt auf selbständige Gerichtszweige hat den Vorteil, daß für die verschiedenen Sachgebiete besondere Gerichte zur Verfügung stehen die mit größerer Sachkunde entscheiden können.

Unter Beachtung der gegenwärtigen Entwicklung hinsichtlich der Reduzierung der Streitkräfte und der bestehenden Militärdoctrin sollte in Friedenszeiten auf Militärgerichte als einer eigenen Gerichtsbarkeit verzichtet werden.

Höhere Rechtssicherheit im Registerwesen ist erreichbar, wenn das Gericht (wieder) die Führung von Registern (Handels-, Vereins-, Betriebs-, Genossenschaftsregister), ggf. auch des Grundbuchs übernimmt.

Neuer Aufbau des Gerichtssystems

1. Zu bilden ist als Verfassungsorgan ein Verfassungsgericht. Entsprechend der besonderen Stellung des Verfassungsgerichts sind die Richter dieses (und nur dieses) Gerichts von der Volkskammer zu wählen. Grundlegende Aufgabe des Verfassungsgerichts ist es, auf Antrag (Klage) die Verfassungsmäßigkeit erlassener Rechtsvorschriften, einschließlich verabschiedeter Gesetze, zu prüfen (Normenkontrolle). Während Rechtsvorschriften der Exekutive vom Verfassungsgericht selbst aufgehoben werden könnten, müßte es sich bei Gesetzen — der Dominanz der Obersten Volksvertretung folgend — darauf beschränken, deren Verfassungswidrigkeit festzustellen und sie an das Parlament zurückzuverweisen, das dann selbst über die Aufhebung des Gesetzes entscheiden müßte. Weitere Aufgaben für ein Verfassungsgericht, wie z. B. die Entscheidung über Verfassungsbeschwerden, sind — in Anlehnung an die Kompetenz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er BRD — zu prüfen und in einem entsprechenden Gesetz zu regeln.

2. Die höchste rechtsprechende Gewalt wird innerhalb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durch das Oberste Gericht ausgeübt. Die bisherige Stellung des Obersten Gerichts als Organ der Volkskammer, das die Rechtsprechung zu „leiten“ hat, ist als Folge der Gewaltenteilung in Frage zu stellen. Das betrifft ebenso die Ausübung der Aufsicht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Tätigkeit des Obersten Gerichts durch den Staatsrat (Art. 74 Abs. 1 Verfassung). Angestrebt werden sollte, das Oberste Gericht unter die vom Ministerium der Justiz wahrzunehmende Justizverwaltung und Dienstaufsicht zu stellen.

Die Gewährleistung der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hat ausschließlich durch höchstgerichtliche Rechtsprechung zu erfolgen. Alle bisherigen administrativen Formen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sind aufzugeben. Zu prüfen ist auch, ob es künftig einer für die Rechtsprechung verbindlichen Richtlinienkompetenz des Obersten Gerichts bedarf. Die Funktion seines Plenums ist neu zu bestimmen.

3. Die nachgeordneten Gerichte werden in Übereinstimmung mit der durch eine Verwaltungsreform zu schaffenden politisch-territorialen Gliederung zu ordnen sein. An der Gliederung des Gerichtssystems in drei Ebenen sollte dabei festgehalten werden. Als Gerichte erster Instanz werden — von gesetzlichen Ausnahmen abgesehen — auch weiterhin die Kreisgerichte, als Gerichte zweiter Instanz bei Wegfall der Bezirksgerichte die neu zu bildenden Oberlandesgerichte tätig. Gegen deren Entscheidungen sollte die Revision vor dem Obersten Gericht möglich sein.

4. Die Veränderungen im politischen System werfen die Frage nach der Perspektive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auf. Als Element der Mitwirkung der Bürger an der Rechtsprechung gehören sie zu den wenigen ehrenamtlichen Gremien, in denen die Bürger bisher tatsächlich etwas zu entscheiden hatten.

Dieses gesellschaftliche Engagement weiterhin zu erhalten, zu fördern und für sein Wirken neue Formen zu finden ist ein wichtiges Anliegen demokratischer Justizentwicklung. Es muß auch künftig Formen geben, die eine vorgegerichtliche Schlichtung ermöglichen.

Für die Tätigkeit von Konfliktkommissionen bestehen keine Voraussetzungen mehr. An ihrer Stelle sind in den Betrieben zur Klärung arbeitsrechtlicher Konflikte Schlichtungsstellen zu bilden. Für den Fall erfolgloser Schlichtung ist die (direkte) Inanspruchnahme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vorzusehen.

5. Die Verantwort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als ein Organ der Regierung gegenüber den Rechtspflegeorganen hat sich künftig auf die Aufgaben der Justizverwaltung zu erstrecken. Dazu zählen vor allem die Aufsicht über die Dienstverrichtung der Rechtspflegeorgane, die Personalangelegenheiten, die Gerichts- und Verwaltungsorganisation, die Bereitstellung aller materiellen, finanziellen und ökonomis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Dienstverrichtung der Rechtspflegeorgane, die Führung der einheitlichen Gerichts- und Notariatsstatistik und die Organisation der Weiterbildung.

Anzustreben ist eine einheitliche, alle Rechtspflegeorgane

erfassende Justizverwaltung, die sich künftig auch auf das Oberste Gericht und die Staatsanwaltschaft erstreckt und diese der Dienstaufsicht des Ministeriums unterstellt.

Justizverwaltung wird sich durch fachkompetente Anleitung und den Erlaß von Verwaltungsakten in Form von Anordnungen, Verfügungen und Weisungen des Ministers.

Gewährleistung der Unabhängigkeit der Richter

Ein zentrales Problem der Justizreform betrifft den Ausbau der Garantien für die Unabhängigkeit der Richter. Dazu muß das in Vorbereitung befindliche Richtergesetz die entscheidenden Grundlagen schaffen. Die Richter sind einzig und allein an die Verfassung und die Gesetze der DDR gebunden und entscheiden auf deren Grundlage eigenverantwortlich nach ihrer richterlichen Überzeugung.

1. Die *sachliche Unabhängigkeit* des Richters hat zu sichern, daß auf ein Gerichtsverfahren oder eine Gerichtsentscheidung — außerhalb prozessualer Rechte und Pflichten — keinerlei Einfluß ausgeübt wird. Eine Mischachtung dessen muß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nach sich ziehen. Hinsichtlich der Rechtsprechung unterliegt der Richter keinen Weisungen Dienstvorgesetzter. Empfehlungen und Hinweise zu anhängigen Verfahren sind unzulässig. Abzulehnen sind ebenso Formen „mittelbarer“ Einwirkungen (z. B. Benachteiligung im Amt); die einem mit der Gesetzesbindung nicht zu vereinbarenden Druck erzeugen.

Es ist mit der Unabhängigkeit nicht vereinbar, wenn der Richter gleichzeitig Mitglied einer Volksvertretung oder ihrer Organe ist oder in anderen Formen an der Arbeit der Volksvertretungen teilnimmt. Er kann sich in Parteien organisieren und sich politisch betätigen, hat sich dabei jedoch so zu verhalten, daß das Vertrauen in seine Unabhängigkeit nicht beeinträchtigt wird.

2. Ohne *persönliche Unabhängigkeit* der Richter kann wirkliche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nicht gewährleistet werden. Das erfordert vor allem die dienstrechtliche Stellung des Richters durch *Berufung auf Lebenszeit* so abzusichern, daß er auch ohne Gefahr für seine Stellung Recht sprechen kann. Die bisher vorgesehene Wahl der Richter durch die Volksvertretungen schafft Abhängigkeiten. Vor der Berufung als „Richter auf Lebenszeit“ sollte der Betreffende zunächst in das Dienstverhältnis „Richter auf Probe“ berufen werden. Die Berufung wird — mit Ausnahme der Verfassungsrichter — vom Minister der Justiz vorgenommen, der sich auf die Vorschläge des Richterrates als Vertretungskörperschaft der Richter stützt.

3.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ist auch eine Frage der *Richterpersönlichkeit* selbst und damit im weitesten Sinne des richterlichen Ethos. Bereitschaft und Befähigung zum Richteramt müssen bei der Auswahl der Richter und ihrer Beförderung stärker beachtet werden. Fähigkeit und Bereitschaft des Richters, objektiv und unabhängig, frei von jeglichen Weisungen, Wünschen oder Empfehlungen anderer, aber genauso frei von eigenen Vorurteilen, Aversionen und Voreingenommenheiten ausschließlich nach Recht und Gesetz zu entscheiden, sind wesentliche Bedingungen für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Glaubwürdigkeit und Autorität der Rechtspflege können nur dann Bestand haben, wenn die persönliche Integrität des Richters über jeden Zweifel erhaben ist.

4.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schließt ebenso die *materielle Unabhängigkeit* des Richters ein. Ein Richter muß so bezahlt werden, daß er auch finanziell unabhängig ist und jedweder Eingriff in seine Rechtsposition vermieden wird. Die bisherige Besoldung wird dem nicht gerecht. Die Entwicklung vom Sicherheitsstaat zum Rechtsstaat muß auch mit einer Verbesserung der sozialen Stellung des Richters einhergehen und dazu führen, daß das Richteramt als höchstes juristisches Amt von der Gesellschaft anerkannt und entsprechend, d. h. bedeutend höher als gegenwärtig, vergütet wird. Ein knapper Staatshaushalt darf dem nicht entgegenstehen.

5. Die Richter unterstehen der *Dienstaufsicht*, die ihre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jedoch nicht beeinträchtigen darf. Die Dienstaufsicht erstreckt sich auf den gesamten Dienstbereich des Richters, also auch auf den der Rechtsprechung zugehörigen Dienstbereich. Sie hat generell die Aufgabe, die

Einhaltung der Dienstpflichten zu kontrollieren. Im Rahmen der Dienstaufsicht sind Weisungen zulässig. Sie beschränken sich im rechtsprechenden Bereich auf die „äußere“ Art und Weise der Amtsführung (z. B. Wahrung der Gerichtskultur, allgemeine Hinweise auf zügige Verfahrenserledigung). Gegen Maßnahmen der Dienstaufsicht muß dem Richter das Recht der Beschwerde zustehen, über die von einem Spruchkörper zu entscheiden ist.

Die Ausübung der Dienstaufsicht ist Bestandteil der Justizverwaltung, die vom Ministerium der Justiz geleitet wird.

6. Die *Mitwirkung der Schöffen* in der Rechtsprechung muß an Qualität gewinnen. Durch die Schaffung von Schöffengerichten, d. h. von Spruchkörperschaften der 1. Instanz, die mit einem Richter als Vorsitzendem, einem weiteren Richter und 3 Schöffen besetzt und für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in Strafverfahren von besonderer Bedeutung (z. B. Mord) zuständig sind, können neue Möglichkeiten erschlossen werden. Die Tätigkeit der Schöffen hat sich künftig auf die Ausübung der Rechtsprechung zu konzentrieren. Es muß gesetzlich garantiert sein, daß sie dafür von ihrer Arbeit freigestellt werden und keine beruflichen, finanziellen oder sonstigen persönlichen Nachteile haben.

Stellung und Aufgaben der Staatsanwaltschaft

Stellung und Aufgaben der Staatsanwaltschaft sind neu zu durchdenken. Mit der Schaffung eines umfassenden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und der damit verbundenen Gesetzlichkeitskontrolle durch die Gerichte entfallen bei der Staatsanwaltschaft die ihr bislang obliegenden Aufgaben der Allgemeinen Gesetzmäßigkeitsaufsicht.

Dem Prinzip der Gewaltenteilung folgend ist anzustreben, den Generalstaatsanwalt künftig nicht mehr direkt dem Staatsrat und der Volkskammer, sondern der Dienstaufsicht des Ministers der Justiz zu unterstellen und die Staatsanwaltschaft in den Territorien den jeweiligen Gerichten beizuordnen. Hierbei sind die vor Verselbständigung der Staatsanwaltschaft gemachten früheren Erfahrungen ebenso zu prüfen wie die der BRD.

Stellung und Aufgaben der Notare

Bei einer Neufassung der Stellung und Aufgaben der Notare ist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staatlichen Notariate bislang einerseits Aufgaben mit Entscheidungscharakter (z. B. die Anordnung und Aufhebung von Pflegschaften und Vormundschaften und Entscheidungen in Erbschafts- und Nachlassangelegenheiten) und andererseits der vorsorgenden Rechtspflege (z. B. Beglaubigungen und Beurkundungen) zu erfüllen hatten. Die traditionell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zugehörenden und bisher notariell getroffenen Entscheidungen werden wegen ihrer Bedeutung auch wieder in die richterliche Tätigkeit einzugliedern sein. Die Tätigkeit des Notars sollte sich auf vorsorgende Aufgaben erstrecken. Bei einer solchen Aufgabenzuweisung wäre es möglich, die Notare in die Kreisgerichte einzugliedern und dafür spezielle Struktureinheiten (Notarkammer oder Abteilung Notariatsangelegenheiten) zu schaffen.

Der Notar sollte berufen und ihm ein Notarbereich zugewiesen werden. Die Dienstaufsicht sollte der Präsident des übergeordneten Gerichts ausüben.

Rolle und Aufgaben der Rechtsanwälte

Ausgehend von ihren Berufspflichten wachsen Rolle und Aufgaben der Rechtsanwälte. Unter Berücksichtigung des weiter zunehmenden Bedarfs an rechtsanwaltlicher Tätigkeit für die Bürger und für andere Auftraggeber (z. B. durch die weitere Ausgestaltung des Verwaltungsrechts, die Erweiterung der Pflichtverteidigungen u. a.) bedarf es einer Erhöhung der Anzahl der Rechtsanwälte und der zunehmenden Spezialisierung in ihrer Tätigkeit. Zu sichern ist das Prinzip der freien Anwaltswahl für jeden Auftraggeber und die Gewährleistung der kurzfristigen Wahrnehmung aller Aufträge mit Initiative, Engagement und in hoher Qualität.

Durch ein neues Gesetz über die Rechtsanwälte in der DDR sind die Aufgaben der Rechtsanwaltschaft zu erweitern und ihre Selbstverwaltung zu garantieren. Jeder Rechtsanwalt muß selbst entscheiden können, in welcher Form (Mitglied eines Kollegiums, Anwalt in eigener Praxis, Mitglied einer Sozietät) er seine Tätigkeit ausübt.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Selbstverwaltung der Anwaltschaft könnten durch die Bildung von Rechtsanwaltskammern auf Länderebene, deren Vorstände durch die Rechtsanwälte demokratisch zu wählen sind, geschaffen werden. Diese Gremien sollten in umfassender Weise befugt sein, die Rechtsanwälte des Territoriums zu vertreten, über die Neu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zu entscheiden und bei Berufspflichtverletzungen über die disziplinarische Verantwortlichkeit zu befinden. Ein rechtlich zu regelndes Zulassungsverfahren, welches in eigener Verantwortung durch die Rechtsanwaltschaft durchzuführen wäre, sollte allen Bewerbern gleiche Möglichkeiten geben, Rechtsanwalt zu werden. Voraussetzung sollten nur persönliche und fachliche Befähigung, die im Zulassungsverfahren nachzuweisen wäre, sein.

Verantwortung für den Strafvollzug

Der Strafvollzug sind Gesetzmäßigkeit, Gerechtigkeit und Gleichheit vor dem Gesetz als grundlegende Prinzipien bei der Verwirklichung von Strafen mit Freiheitsentzug durchzusetzen und die Haft-,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der Strafgefangenen entscheidend zu verbessern. Das erfordert, den Strafvollzug künftig der Justizverwaltung zu unterstellen. Bisher gehört der Strafvollzug zum Verantwortungs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Innere Angelegenheiten und unterliegt der Aufsicht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die jedoch, wie entstandene Probleme und vorgebrachte Kritiken zeigen, diese Aufgabe nur ungenügend wahrgenommen hat bzw. wahrnehmen konnte. Rechtsstaatlichkeit schließt ein, den Strafvollzug von Organen, die Kompetenzen im Rahmen der Strafverfolgung ausüben, strikt zu trennen. Mit dem Übergang zur Länderstruktur sollte deshalb der Strafvollzug aus dem Ministerium für Innere Angelegenheiten herausgelöst und den zu bildenden Länderjustizministerien unterstellt werden.

Auch der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bedarf dringend gesetzlicher Regelungen, die den Gerichten weitgehende Kompetenzen bei Entscheidungen in diesem Bereich einräumen.

Aufgaben der Gesetzgebung

Da die Gesetzgebung gilt es, solche Strukturen zu schaffen, die garantieren, daß Gesetze auf breiterer demokratischer Grundlage zustandekommen. Es muß zur Selbstverständlichkeit werden, daß alle grundlegenden, das Leben der Menschen betreffenden Gesetze im Entwurfsstadium veröffentlicht, der Bevölkerung zur Diskussion unterbreitet und in der Volkskammer in mehreren Lesungen behandelt werden. Personelle und materielle Voraussetzungen sind dafür zu schaffen, daß die Volkskammer als gesetzgebendes Organ mit ihren Fraktionen stärker selbst Gesetzgebungsaufgaben wahrnehmen kann.

Innerhalb der Verantwortung der Regierung für die Vorbereitung von Gesetzesentwürfen und für die exekutive Rechtsetzung obliegt dem Ministerium der Justiz nur die Erarbeitung von Rechtsvorschriften auf den Rechtsgebieten, die in den Bereich der Gerichtsbarkeit fallen und die justizielle Tätigkeit betreffen (Justizgesetzgebung). Bei allen anderen, von den sachlich zuständigen Organen vorzubereitenden Gesetzes- und Verordnungsentwürfen beschränkt sich die Verantwort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auf die Prüfung ihrer Rechtsformlichkeit, d. h. es hat darauf hinzuwirken, daß die vorgesehenen rechtlichen Regelungen von den maßgebenden verfassungsmäßigen Grundsätzen getragen sind und sich in die Rechtsordnung des Landes einfügen.

Die Planung der Gesetzgebung über einen Zeitraum von fünf Jahren muß aufgegeben werden, da sie den Erfordernissen einer flexiblen Gesetzgebung nicht gerecht wird und den Gesetzgebungsprozeß in unnötiger Weise verbürokratisiert.

Informationen

Mit Wirkung vom 1. März 1990 wurde die ehemalige Akademie für Staats- und Rechtswissenschaft der DDR im Zusammenhang mit der Neubestimmung ihrer Aufgaben zu einer Hochschule für Recht und Verwaltung umgebildet (vgl. GBl. I Nr. 8 S. 45).

Die Hochschule hat u. a. die Aufgabe, eine juristische Ausbildung durchzuführen, deren Absolventen besonders für eine Arbeit in den Organen der staatlichen Verwaltung und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befähigt sind;

Mitarbeiter der Organe der staatlichen Verwaltung auf den Gebieten der Rechtswissenschaft, der Wirtschaftswissenschaft und der Verwaltungsorganisation weiterzubilden;

zum wissenschaftlichen Vorlauf für die Gesetzgebung und andere Entscheidungen von Staatsorganen sowie für die Arbeit der staatlichen Verwaltung und der Justizorgane beizutragen;

unmittelbar an der Gesetzgebung durch eigene Vorschläge und Aufträge mitzuwirken.

Als Rektor der Hochschule wurde Prof. Dr. sc. Rolf Steining nach seiner Wahl im Wissenschaftlichen Rat bestätigt.

Gesetzgebung kann sich nur in Übereinstimmung mit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vollziehen, die sich nicht in Pläne zwingen läßt. Jede Fraktion und jeder Abgeordnete muß jederzeit und unabhängig von einer Planung das Recht haben, Gesetzesentwürfe einzubringen.

Zur Arbeit in Personalangelegenheiten

Aus den angestrebten Änderungen in Struktur und Aufgaben der Justizorgane und aus den veränderten Anforderungen der in diesem Bereich Tätigen ergeben sich mit Notwendigkeit auch Veränderungen für die Arbeit in Personalangelegenheiten.

Für künftige Personalentscheidungen können soziale Herkunft und parteipolitische Bindung keine Kriterien sein, sondern ausschließlich Fachkompetenz, Volksverbundenheit, Aufrichtigkeit, Integrität und Leistungsvermögen. Die Personalangelegenheiten sind von Einflüssen politischer Parteien, gesellschaftlicher Organisationen u. a. vollständig zu trennen. Die Kaderarbeit der zentralen Justizorgane läßt sich in der bisher praktizierten Form nicht mehr verwirklichen.

Im Richterbereich sollten sich mit der Wiedereinführung der Berufung der Richter folgende Schwerpunkte der Personalarbeit ergeben:

- Einführung eines neuen Vorbereitungsdienstes für Richteranwärter mit der Möglichkeit, sie als Richter kraft Auftrags mit eingeschränktem Befugnissen tätig werden zu lassen; Abschluß des Vorbereitungsdienstes mit einer Prüfung und die sich anschließende erste Berufung als Richter auf Probe nach einheitlichen Kriterien, die Subjektivismus weitgehend ausschließen;
- Sicherung des bedarfsgerechten Einsatzes von Richtern auf Lebenszeit, wenn der vollständige Nachweis der fachlichen und persönlichen Befähigung erbracht wurde;
- Einbeziehung des Richterrates bzw. Dominanz der Entscheidungen des Rates für die Personalentscheidungen bei Beförderungen usw.;
- Prüfung der Möglichkeit der Bewerbung der Richter um ein höheres Amt (Ausschreibung freierwerdender Funktionen in der Rechtsprechung und Justizverwaltung).

Hinsichtlich der Zulassung zum juristischen Hochschulstudium sollte angestrebt werden, die bisherige Delegation zum Hochschulstudium aufzugeben und eine planmäßige Berufswerbung einzuführen, die Lenkung durch Ausschreibung freier Justizstellen zu ersetzen und anstelle des obligatorischen Justizpraktikums im Hochschulstudium fakultative Praktika anzubieten.

Die konsequente Verwirklichung der Justizreform wird einen erheblichen Mehrbedarf an juristisch qualifizierten Kadern mit sich bringen. Die derzeit herangebildeten Juristen können bestenfalls den auch ohne jegliche Veränderungen entstehenden Bedarf abdecken. Eine bedeutende Erweiterung des juristischen Ausbildungspotentials ist daher notwendig.

Nummer 12

Neue Justiz

Zeitschrift
für Rechtsetzung
und Rechtsanwendung

Beilage zu
Heft 6/90
Seiten I–XVI

Ministerium der Justiz der DDR

Arbeitsgruppe „Rechts- und Justizreform

Zur Durchführung einer auf die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gerichteten

Rechts- und Justizreform

Inhalt

1. Ziel und Wege der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III	4.4. Materielles Recht	VIII
1.1. Notwendigkeit und Ziel der Rechtsangleichung	III	4.4.1.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Wirtschaftsrecht	VIII
1.2. Rechtsangleichung als längerfristiger Prozeß	III	4.4.2. Zivilrecht	VIII
1.3. Rechtsangleichung als wechselseitiger Prozeß	III	4.4.3. Familienrecht	IX
1.4. Internationale Implikationen	III	4.4.4. Arbeitsrecht	IX
2. Grundlegende Probleme für eine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III	4.4.5. Strafrecht	IX
2.1. Dispositionsmöglichkeiten und -grenzen bei der Rechtsangleichung	III	4.4.6. Verwaltungsrecht	IX
2.2. Rechtsangleichung als auf die künftige Rechtsgestaltung zielende Aufgabe	III	4.5. Strafvollzug	X
2.3. Rechtsangleichung als gemeinsame Aufgabe beider deutscher Staaten	IV	5. Stufen der Rechtsangleichung	X
3. Verfassungsrechtliche Wege und Probleme	IV	5.1.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X
3.1.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IV	5.1.1. Gesetzgeberische Maßnahmen im Verantwortungsbereich des MdJ	X
3.2. Verfassungsrechtliche Änderungen im Vorfeld der Vereinigung	IV	5.1.2. Gesetzgebungsaufgaben in Verantwortung anderer Organe	XI
4. Entwicklungsrichtungen der Rechtsangleichung auf einzelnen Gebieten	IV	5.2. Schaffung konföderativer Strukturen (Länderbildung)	XII
4.1. Neuer Stellenwert des Rechts	IV	5.2.1. Verfassungsrecht	XIII
4.2. Neuordnung der Rechtspflege	V	5.2.2. Gerichtsverfassungsrecht	XIII
4.2.1. Schaffung neuer Gerichtsbarkeiten	V	5.2.3. Justizverwaltung	XIII
4.2.2. Gerichtsorganisation und Gliederung des Gerichtssystems	V	5.2.4. Freiwillige Gerichtsbarkeit	XIII
4.2.3. Stellung des Richters und Gewährleistung seiner Unabhängigkeit	VI	5.2.5. Notariatsrecht	XIII
4.2.4. Mitwirkung von ehrenamtlichen Richtern	VI	5.2.6. Anwaltsrecht	XIII
4.2.5. Staatsanwaltschaft	VI	5.2.7. Strafvollzugsrecht	XIII
4.2.6. Freiwillige Gerichtsbarkeit	VI	5.3. Vorbereitung der Vereinigung beider Staaten	XIV
4.2.7. Notariatsorganisation	VI	6. Personelle Voraussetzungen für die Neuordnung der Rechtspflege	XIV
4.2.8. Rechtsanwaltschaft	VII	6.1. Vergangenheitsbewältigung	XIV
4.2.9.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VII	6.2. Richterrechtliche Probleme	XIV
4.3. Prozeßrecht	VII	6.3. Personeller Mehrbedarf	XIV
4.3.1. Zivilprozeßrecht	VII	6.4. Fortbildung der in der Praxis tätigen Juristen	XIV
4.3.2. Strafprozeßrecht	VII	6.5. Harmonisierung der Ausbildung	XV
4.3.3. Verwaltungsgerichtsverfahren	VIII	6.6. Künftige Fortbildungskonzeption	XV
4.3.4. Zwangsvollstreckung	VIII	7. Materielle Voraussetzungen	XV
4.3.5. Insolvenzrecht	VIII	8. Organisation der Maßnahmen zur Rechtsangleichung und zur Rechts- und Justizreform	XV
		<hr/>	
		Aus dem gemeinsamen Protokoll über Leitsätze zum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XVI

1. Ziel und Wege der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Die tiefgreifenden, radikalen Umwälzungen in der DDR, die zu den ersten freien und geheimen Wahlen in ihrer Geschichte führten, haben die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auf die Tagesordnung der praktischen Politik gesetzt. In Gang gekommen ist ein Prozeß, in dem sich die Gesellschaft in Überwindung zentralistisch-administrativ ausgeformter Mechanismen auf der Grundlage pluralistischer Interessen und Meinungen demokratisch neu formiert und der neue Eigentums- und Wirtschaftsformen hervorbringt. Diese Entwicklung geht einher mit einer zunehmenden Verflechtung der DDR und der BRD, durch die der Boden für die staatliche Einheit geschaffen und in der Vereinigung beider Staaten münden wird.

1.1. Notwendigkeit und Ziel der Rechtsangleichung

Der Prozeß der Vereinigung der DDR und der BRD schließt — unabhängig vom verfassungsmäßigen Weg — die Angleichung beider Rechtsordnungen ein. Alle Schritte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müssen durch rechtsangleichende Maßnahmen vorbereitet, begleitet und abgeschlossen werden.

Ziel der Rechtsangleichung ist die Schaff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ordnung. Dies ist kein nur rechtstechnischer, sondern ein inhaltlich komplizierter Prozeß, in dem die Erfahrungen beider Rechtsordnungen produktiv zu verarbeiten und "in eine Fortentwicklung zu nutzen sind.

1.2. Rechtsangleichung als längerfristiger Prozeß

Die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läßt sich nicht im Schnellverfahren, sondern nur auf längere Sicht verwirklichen und erfordert ein schrittweises Vorgehen. Das Recht der DDR hat sich über 40 Jahre auf der Grundlage der von ihr bisher verfolgten Gesellschaftskonzeption entwickelt und kann deshalb nicht kurzzeitig mit dem Recht der BRD zusammengeführt werden: Die Schaff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ordnung bedarf längerer Übergangszeiten und -formen und wird nur über mehrere Zwischenstufen zu erreichen sein. In einzelnen Bereichen werden und können Unterschiede im System der rechtlichen Regelung fortbestehen.

1.3. Rechtsangleichung als wechselseitiger Prozeß

Die deutsch-deutsche Rechtsangleichung muß ein wechselseitiger Prozeß des Zusammenwachsens beider Rechtsordnungen sein, in dem beide Seiten das einbringen, was Bestandteil gesamtdeutschen Rechts werden muß. Durch eine einseitige und uneingeschränkte Übernahme bundesdeutschen Rechts en bloc kann die Rechtsinheit nicht hervorgebracht werden, da in der DDR auf nahezu allen Gebieten dem Recht der BRD nicht entsprechende Verhältnisse gewachsen sind, deren vollständige Umstellung längere Zeit beanspruchen wird und vorbereitende Anpassungs- und Übergangsvorschriften erfordert. Auch die DDR verfügt über Regelungen, die für eine gesamtdeutsche Rechtsordnung Vorbildwirkung haben können. Wenngleich die Rechtsangleichung kein einseitiger Weg sein kann, ist jedoch davon auszugehen, daß sich der Prozeß der Schaff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ordnung unter Dominanz des Rechts der BRD vollziehen wird.

Das Recht der DDR war weitgehend ideologisch durchdrungen und regelte gesellschaftliche Verhältnisse, die nicht mehr fortbestehen. Gerade jene rechtlichen Regelungen, die auf das bisherige Wirtschaftssystem und den monolithischen Machtapparat zugeschnitten waren (weite Teile des Staats-, Wirtschafts- und Verwaltungsrechts), können künftig keinen Bestand mehr haben. Mit dem Übergang zu pluralistischen und föderativen Strukturen und mit der Einführung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entstehen Regelungsbedürfnisse, für die die DDR kaum etwas vorzuweisen hat. Die DDR wird hier deshalb vorrangig das Recht der BRD übernehmen und sich im Prozeß der Rechtsangleichung am bundesdeutschen Recht orientieren müssen.

Andererseits gibt es auch eine ganze Reihe von Bereichen, in denen die DDR über Regelungen verfügt, die es zu bewahren und in eine gesamtdeutsche Rechtsordnung einzubringen gilt, z. B. auf Teilgebieten des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 Ziel der Rechtsangleichung muß es hier sein, die Regelungen in ihrer Substanz zu erhalten. Ein wesentlicher und erhaltenswerter Vorteil des Rechts der DDR vor allem im Bereich der Bürgerbeziehungen besteht darin, daß es einfacher, verständlicher und damit zugänglicher ist.

Die Rechtsangleichung bietet den sich vereinigenden Staaten die Chance zur Rechtserneuerung überall dort, wo im Inter-

esse des Rechtsfortschritts oder der Rechtsbereinigung Neueregungen anzustreben sind, sollte der Vereinigungsprozeß genutzt werden, gemeinsam neues bzw. einfacheres Recht zu schaffen.

1.4. Internationale Implikationen

Der Weg zur deutschen Einheit kann sich nur eingebettet in den europäischen Prozeß vollziehen und hat zu berücksichtigen, daß sich zwei souveräne Staaten vereinigen wollen, die gleichberechtigte Mitglieder der UNO, der KSZE und anderer völkerrechtlicher Gremien sind, die eine Vielzahl multilateraler und bilateraler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mit nicht identischen Partnern abgeschlossen haben und die selbst z. Z. noch durch eine Reihe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miteinander verbunden sind.

Die Vereinigung zu einem Gesamtstaat erfordert eine Klärung der komplizierten Probleme der Staatenfolge in Verträge und Bündnisabkommen, die sich zum Teil nach ihrem Zweck und Ziel gegenseitig ausschließen, wenn auch generell das Prinzip der Vertragskontinuität für die bisherigen territorialen Geltungsbereiche völkerrechtlicher Verträge maßgeblich ist. Eine Lösung dieser Fragen kann nur einvernehmlich zwischen BRD und DDR einerseits und den jeweiligen Vertragspartnern angestrebt werden. Es bedarf der rechtzeitigen Überprüfung der völkerrechtlichen Verpflichtungen beider deutscher Staaten und der Feststellung, welche innerstaatlichen Rechtsvorschriften zu erlassen, zu ändern oder außer Kraft zu setzen sind, um die strikte innerstaatliche Einhaltung völkerrechtlicher Verpflichtungen auch nach der Fusion zu gewährleisten.

Die deutsch-deutsche Rechtsangleichung hat die Folgerungen aus dem sich entwickelnden europäischen Recht zu berücksichtigen. Der Weg zum europäischen Recht führt über das Recht der BRD, weil dieses in weiten Teilen, vor allem im Wirtschaftsbereich, bereits EG-Recht ist.

2. Grundlegende Probleme für eine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2.1. Dispositionsmöglichkeiten und -grenzen bei der Rechtsangleichung

Im Prozeß de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ß eine alsbaldige vollständige Vereinheitlichung der beiden Rechtssysteme nicht möglich und auch nicht erforderlich ist. Die Herstellung der staatlichen Einheit muß nicht zwingend mit einer Rechtsinheit verbunden sein. Es ist möglich, daß in bestimmten Regelungsbereichen auch nach einer staatlichen Vereinigung rechtliche Unterschiede fortbestehen.

Das wird vor allem jene Sachgebiete betreffen, die im Zuge des Übergangs zu föderativen Strukturen ohnehin von den (künftigen) Ländern auszufüllen sind. Dabei wird der vom Grundgesetz der BRD vorgegebene Verteilung der Gesetzgebungsbefugnisse zwischen Bund und Ländern (Art. 70 ff. GG) zu folgen sein. Sie steht, da die gesamte Staats- und Rechtsordnung der BRD auf dieser Grundlage gewachsen ist, selbst bei der Erarbeitung einer neuen gesamtdeutschen Verfassung, wohl nicht zur Disposition. Abweichungen sind nur im Rahmen auszuhandelnder Vereinbarungen denkbar, die der DDR (bzw. ihren Ländern) für eine Übergangszeit die Anwendung bisherigen Rechts ermöglichen.

Mit dem Übergang zu einer föderativen Ordnung in der DDR wird die Schaffung adäquater Strukturen und Organisationsformen erforderlich. Anders als im materiellen Recht, wo unterschiedliche Regelungen vorerst nebeneinander gelten können, ist hinsichtlich der Organisation der staatlichen Gewalt und der ihre Tätigkeit regelnden Verfahren Kompatibilität anzustreben, um beide Staaten unter das Dach einer gemeinsamen bundesstaatlichen Ordnung zusammenführen zu können.

2.2. Rechtsangleichung als auf die künftige Rechtsgestaltung zielende Aufgabe

Anliegen der Rechtsangleichung kann es nur sein, das für die künftige Rechtsgestaltung erforderliche Recht hervorzubringen und ein auf die föderative Entwicklung der vereinten beiden deutschen Staaten gerichtetes Recht zu schaffen. Die Rechtsangleichung zielt grundsätzlich nicht auf die Regelung sog. Altfälle und auf die Klärung umstrittener Ansprüche von Personen. Rückabwicklungen bedürfen dort, wo erforderlich, besonderer Erörterungen und Vereinbarungen und müssen hier außer Betracht bleiben. Als Grundsatz für die künftige

Rechtsangleichung sollte jedoch gelten, daß Rechte, die auf der Grundlage der jeweiligen Rechtsordnung entstanden sind, erhalten bleiben und im Kollisionsfall in Abwägung der Interessen auszugleichen sind.

2.3. Rechtsangleichung als gemeinsame Aufgabe beider deutscher Staaten

Eine vernünftige, ausgewogene und die Erfahrungen und Bedürfnisse beider deutscher Staaten berücksichtigende Rechtsangleichung kann nicht im Nebeneinander, schon gar nicht im Gegeneinander, sondern nur im Miteinander beider Seiten bewältigt werden. Es bedarf deshalb einer koordinierten Zusammenarbeit bei der Vorbereitung und Realisierung der auf die Rechtsangleichung gerichteten Maßnahmen. Die wechselseitige Einbeziehung in die Vorbereitung von Gesetzgebungsvorhaben wäre wünschenswert. Da die DDR im Vorfeld und im Zuge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und mit dem Übergang zu föderativen Strukturen kurzfristig eine Vielzahl geltender gesetzlicher Bestimmungen aufheben oder abändern bzw. in Anlehnung an das bundesdeutsche Recht zu Neuregelungen gelangen muß, wird sie ohne die Hilfe bundesdeutscher Institutionen nicht auskommen. Es gilt, auf allen relevanten Gebieten eine wirksame Kooperation zu entwickeln, die Prioritäten für die Rechtsangleichung abzustimmen und auf dieser Grundlage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gemeinsam vorzubereiten (vgl. dazu Abschn. 8).

3. Verfassungsrechtliche Wege und Probleme

3.1.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Die Regierungserklärung vom 19. April 1990 geht davon aus, den Weg zur deutschen Einheit „über einen vertraglich zu vereinbarenden Weg gemäß Art. 23 des Grundgesetzes zu verwirklichen“. Das beruht auf der von den Regierungsparteien getroffenen Koalitionsvereinbarung, in der es heißt, die „Einheit Deutschlands nach Verhandlungen mit der BRD auf der Grundlage des Art. 23 GG zügig und verantwortungsvoll für die gesamte DDR gleichzeitig zu verwirklichen“.

Art. 23 GG sieht vor, daß das Grundgesetz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 . . nach deren Beitritt in Kraft zu setzen“ ist.

Praktisch geworden ist dieser Weg bisher mit dem Beitritt des Saarlandes zum 1. Januar 1957, dem eine Erklärung seines Landtages vom 14. Dezember 1956 vorausging und dessen Modalitäten durch das Gesetz über die Eingliederung des Saarlandes vom 23. Dezember 1956 (BGBl. I S. 1011) geregelt wurden. Es sah eine schrittweise Einführung bundesrechtlicher Regelungen vor.

Andere deutsche Staaten können ihren Willen zur Vereinigung mit der Bundesrepublik nur in der Form äußern, die ihre Verfassung zuläßt. Die geltende Verfassung der DDR sieht jedoch weder für die Republik als Ganzes noch für ihre Gebietseinheiten einen Beitritt zur Bundesrepublik vor. Für den Beitritt der DDR bedarf es deshalb erst eines staatsrechtlichen Aktes, der den Beitritt zur BRD ermöglicht. Ein Beitritt liegt vor, wenn auf dieser Grundlage gegenüber der BRD eine auf freiwilliger Entschließung des Volkes beruhende Beitrittserklärung abgegeben worden ist. Wirksam wird der Beitritt aber erst zu dem Zeitpunkt, zu dem das Grundgesetz — vom bundesdeutschen Gesetzgeber — für den Beitretenden in Kraft gesetzt wird.

Aus der Kompliziertheit und dem Umfang der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zu lösenden Sachprobleme folgt, daß das Beitrittsverfahren nach Art. 23 GG nur zeitlich gestreckt realisiert werden kann. Der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würde nicht automatisch die Geltung der gesamten bundesdeutschen Rechtsordnung nach sich ziehen. Art. 23 GG läßt ein schrittweises Vorgehen zu und eröffnet durchaus Gestaltungsmöglichkeiten. Die „Beitrittsbedingungen“ können im Vorfeld ausgehandelt werden. Eine stufenweise Inkraftsetzung des Grundgesetzes und eine zeitlich und inhaltlich differenzierte Erweiterung des Geltungsbereichs von Bundesgesetzen sind möglich. Regelungen der DDR, die mit dem Grundgesetz vereinbar sind, könnten fortbestehen. Solche, die ihm allerdings diametral entgegenstehen, könnten keinen Bestand mehr haben.

Am Beginn eines Beitrittsverfahrens nach Art. 23 GG könnte eine Absichtserklärung der neu gewählten Volkskammer stehen. Die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ist staatsvertraglich mit der BRD zu vereinbaren. Das müßte einhergehen mit der Schaffung der dafür erforderlichen, am Recht der BRD orientierten Regelungen durch die Volkskammer und die Regierung der DDR. In der weiteren

Entwicklung sind auf den einzelnen Regelungsgebieten die sich aus einer Vereinigung ergebenden Konsequenzen anzuloten, müssen die erforderlichen Modalitäten bestimmt und — wo notwendig — Anpassungs- und Übergangsregelungen geschaffen werden. Seinen Abschluß findet dieser Prozeß mit der förmlichen Beitrittserklärung der Volkskammer, einem Aufnahmegesetz der BRD, das Vorbehalte hinsichtlich der endgültigen Rechteinheit zum Inhalt haben kann und gesamtdeutsche Wahlen zu einer gemeinsamen Volksvertretung vorsehen sollte.

Um als gesamtdeutsche Verfassung dienen zu können, müßte das Grundgesetz in den Normen, die den vorläufigen und auf Ausweitung zielenden Charakter des Grundgesetzes zum Inhalt haben, geändert werden. Es ist klarzustellen, daß der neue deutsche Gesamtstaat sich auf das Gebiet der DDR, der BRD und Berlins beschränkt.

Die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auf der Grundlage des Art. 23 GG schließt nicht aus, eine neue gesamtdeutsche Verfassung zu erarbeiten, mit deren Inkraftsetzung — wie in Art. 146 GG vorgesehen — das Grundgesetz seine Gültigkeit verliert.

3.2. Verfassungsrechtliche Änderungen im Vorfeld der Vereinigung

Auf dem Weg zur deutschen Einheit muß schon jetzt, vor einer staatlichen Vereinigung,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in der DDR so verändert werden, daß sie den Grundsätzen eines föderalen, demokratischen und sozialen Rechtsstaates entspricht. Verfassungsrechtliche Vorgaben dafür sind:

- die Übernahme der Grundrechte (Art. 1 bis 19, 101 bis 105 GG);
- die Verankerung des Sozial- und Rechtsstaatsprinzips;
- die Einführung einer bundesstaatlichen Ordnung, die auf der Teilung der staatlichen Gewalten beruht;
- die Schaffung einer demokratischen Kommunalverfassung.

Die Koalition der Regierungsparteien tritt bei der weiteren Gestaltung der Verfassung für Übergangsregelungen ein, die sowohl die Verfassung von 1949 als auch den Verfassungsentwurf des Runden Tisches berücksichtigen¹.

Das kann durch ein Paket von verfassungsändernden oder die Verfassung überlagernden Einzelgesetzen (Staatsorganisationsgesetz, Ländererrichtungsgesetz, Gesetz zur Bildung eines Verfassungsgerichts und eines Rechnungshofes, Gesetz zur Übertragung von Hoheitsrechten auf zwischenstaatliche, insbesondere auf gemeinsame Einrichtungen der deutschen Staaten) geschehen.

Nur eine Wiederinkraftsetzung der Verfassung aus dem Jahre 1949 wird nicht für sinnvoll gehalten. Diese Verfassung ging von einem Gegensatz zwischen Volkssouveränität und Gewaltenteilung aus. Das Prinzip der Rechtsstaatlichkeit der Macht durch Teilung der Gewalten von Parlament, Verwaltung und Justiz ist durch eine Omnipotenz des Parlaments überdeckt. Modifiziert und angereichert durch den Verfassungsentwurf des Runden Tisches könnte jedoch die Verfassung von 1949 die Übergangszeit bis zu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verfassungsrechtlich ausfüllen.

4. Entwicklungsrichtungen der Rechtsangleichung auf einzelnen Gebieten

4.1. Neuer Stellenwert des Rechts

Recht und Rechtsanwendung müssen in Vorbereitung und im Zuge de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einen neuen Stellenwert erlangen. Das Recht galt in der Vergangenheit als Instrument des Staates, der seinerseits als Hauptinstrument monolithischer Machtausübung fungierte. Das ließ darauf hinaus, das Recht als Anhängsel des Staates zu betrachten, nicht aber als Maß der Macht. Um Rechtsstaatlichkeit und Rechtssicherheit zu gewährleisten, sind Legislative, Exekutive und Judikative als voneinander getrennte Träger der Staatsmacht zu organisieren, die sich wechselseitig kontrollieren und begrenzen.

Der Justiz, die bisher als Bestandteil der einheitlichen Staatsmacht galt und wirkte, ist in einer auf den Prinzipien der Gewaltenteilung beruhenden Staatsorganisation ein Platz zuzuweisen, der ihr ein eigenständiges, von anderen staatlichen Gewalten getrenntes Agieren ermöglicht. Die dritte, im Kern rechtsprechende Gewalt hat die Einhaltung von Recht und Gesetz für jedermann zu gewährleisten und die Freiheitsphäre des einzelnen auch vor Übergriffen des Staates zu schützen. Ausgangspunkt und Ziel ihrer Tätigkeit ist der Schutz der verfassungsmäßig garantierten Grund- und Menschenrechte. Diese sind durchweg als subjektive Rechte, d. h.

auch gerichtlich einklagbare Rechte auszugestalten. Dem Bürger ist eine möglichst lückenloser gerichtlicher Rechtsschutz gegen jegliche Verletzung seiner Rechte zu sichern (Rechtsweggarantie). Die Voraussetzungen dafür sind schrittweise zu schaffen.

4.2. Neuordnung der Rechtspflege

Die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und die vorgesehene Schaffung föderativer Strukturen erfordert, die Rechtspflege in der DDR neu zu ordnen. Dabei wird weitgehend von der Organisation der Justiz in der BRD auszugehen sein. Notwendig ist die Schaffung eines funktionsfähigen Rechtspflegesystems, das in der Lage ist, effizienten Rechtsschutz zu gewähren. Das bestehende Rechtspflegesystem in seiner derzeitigen Organisation, Struktur und Personalstärke besitzt hierfür nicht durchweg die Voraussetzungen. Die bestehenden Defizite werden kurzfristig nicht beseitigt werden können. Die Schaffung einer allen rechtsstaatlichen Anforderungen voll entsprechenden, der BRD adäquaten Rechtspflege wird erst in einem längeren, mehrere Jahre umfassenden Prozeß möglich sein.

Die geltenden, die Rechtspflege betreffenden gesetzlichen Regelungen (CVG, GGG, MGO, StAG, Notariatsgesetz, Gesetz über die Kollegien der Rechtsanwältinnen) werden — wie nachfolgend verdeutlicht wird — den sich aus einer Neuordnung ergebenden Anforderungen nicht mehr gerecht. Sie müssen deshalb aufgehoben und durch neue Bestimmungen ersetzt, zumindest aber im notwendigen Umfang korrigiert werden. Aus längerer Sicht scheint es wünschenswert, für das vereinte Deutschland neue Regelungen auf diesem Gebiet zu erarbeiten, die die Erfahrungen und die — auch weiterhin bestehenden — Besonderheiten der Justizentwicklung in der DDR und BRD berücksichtigen und die europäische Entwicklung reflektieren.

4.2.1. Schaffung neuer Gerichtsbarkeiten

In Vorbereitung und im Zuge des Vereinigungsprozesses sind folgende eigenständige Gerichtsbarkeiten einzurichten:

-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 die ordentliche Gerichtsbarkeit für Zivil-, Familien- und Strafsachen,
- die Verwaltungsgerichtsbarkeit,
- die Arbeitsgerichtsbarkeit,
- die Sozialgerichtsbarkeit,
- die Finanzgerichtsbarkeit,
- die Dienst- und Ehrengerichtsbarkeit.

In der anfänglichen Phase der Rechtsangleichung wird die Einrichtung eigenständiger Fachgerichtsbarkeiten wegen fehlender personeller und materieller Voraussetzungen nicht möglich sein.

Deshaß werden die mit einer schrittweisen Erweiterung des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zusätzlich entstehenden Aufgaben der Rechtsprechung zunächst den ordentlichen Gerichten zugeordnet werden müssen. Hier ist bei den auf die Gerichte neu hinzukommenden Angelegenheiten — in Abwägung von der derzeitigen Praxis — schon jetzt eine Konzentration der Spruchkörper auf bestimmte, d. h. nicht alle derzeit bestehenden erstinstanzlichen Gerichte, anzustreben. Diese speziellen Spruchkörper könnten die Vorstufe für die Schaffung eigenständiger (Eingangs-)Gerichte der jeweiligen Fachgerichtsbarkeit sein, deren Zahl wesentlich geringer sein kann als i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Auch in der BRD, in der es 551 Amtsgerichte und 93 Landgerichte gibt, beschränkt sich die Zahl der erstinstanzlichen Gerichte in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auf 34, in der Sozialgerichtsbarkeit auf 50, in der Arbeitsgerichtsbarkeit auf 95 und in der Finanzgerichtsbarkeit auf 14).

Als nebe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aufzubauende eigenständige Fachgerichtsbarkeit sollte zuerst mit der schrittweisen Errichtung einer umfassenden Verwaltungsgerichtsbarkeit begonnen werden, wobei es von nachgeordneter Bedeutung bleiben kann, ob man nur eine Verwaltungsgerichtsbarkeit mit unterschiedlichen Spruchkörpern für allgemeine oder besondere öffentlich-rechtliche Angelegenheiten vorsieht, oder ob man gleich eine Aufteilung in eine allgemeine und in eine gesonderte Finanz- und Sozialgerichtsbarkeit vornimmt.

Die bisher für Wirtschaftstreitsachen zuständigen Staatlichen Vertragsgerichte sind aufzulösen und in die ordentliche Gerichtsbarkeit zu integrieren. Für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von Streitfällen auf dem Gebiet der Wirtschaft und des Handels sind Kammern bzw. Senate für Handelsachen zu bilden.

Ausgehend von der gegenwärtigen Entwicklung können die Militärgerichte als eigenständige Säule der Gerichtsbarkeit

künftig keinen Bestand mehr haben. Militärstrafsachen sind in die ordentliche Gerichtsbarkeit einzugliedern. Für Disziplinarverfahren gegenüber Militärangehörigen, für die Wiedergutmachung schuldhaft verursachter Schäden und für Streitigkeiten aus dem Dienstvertrag sind als Spruchkörper innerhalb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Wehrdienstgerichte bei den Truppen und ein Wehrdienstsenat beim Obersten Gericht zu errichten. Die Wehrdienstgerichte werden Gerichte erster Instanz, als Berufungs- und Beschwerdeinstanz fungiert (vorerst) der Wehrdienstsenat beim OG. Dessen Einrichtung hat zeitweiligen Charakter. Wenn künftig die Zuständigkeit eines Bundesverwaltungsgerichts gegeben ist, muß der Senat an diesem bestehen.

4.2.2. Gerichtsorganisation und Gliederung des Gerichtssystems

4.2.2.1. Verfassungsgericht

Zur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staatlicher Akte ist als Verfassungsorgan für die Zeit der Eigenständigkeit der DDR ein Verfassungsgericht zu bilden. In Anlehnung an Art. 93 GG sollte das Verfassungsgericht vor allem zuständig sein für

- die Prüfung von Rechtsvorschriften; einschließlich Gesetzen auf ihre Verfassungsmäßigkeit (Normenkontrolle),
- Streitfälle zwischen Bund und Ländern,
- die Entscheidung von Verfassungsbeschwerden bei behaupteten Grundrechtsverletzungen,
- das Verbot verfassungswidriger Parteien und politischer Vereinigungen.

Mit der Bildung von Ländern haben diese die Möglichkeit, Landesverfassungsgerichte zu errichten. Diese messen Maßnahmen von Landesorganen am Maßstab der Landesverfassung und haben die Aufgabe, über landesinterne Verfassungstreitigkeiten zu entscheiden.

4.2.2.2. Oberstes Gericht

Als höchstes rechtsprechendes Organ i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fungiert bis zu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das Oberste Gericht der DDR. Seine bisherige Stellung als Organ der Volkskammer, das die Rechtsprechung zu „leiten“ und eine einheitliche Rechtsanwendung durch alle Gerichte zu sichern hat (Art. 93 Verfassung, § 20 GVG) ist aufzugeben. Das betrifft ebenso die Ausübung der Aufsicht über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r Tätigkeit des Obersten Gerichts durch den Staatsrat (Art. 74 Abs. 1 Verfassung).

Die bislang vom Obersten Gericht praktizierten Formen der administrativen Anleitung der Rechtsprechung sind mit einer rechtsstaatlichen Ordnung nicht vereinbar. Auch die gerichtsverfassungsrechtlich sanktionierte Richtlinienkompetenz des Obersten Gerichts ist abzulehnen mit der Konsequenz, daß die erlassenen Richtlinien und Beschlüsse für die Rechtsprechung keine verbindliche Wirkung mehr haben können.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kann sich künftig nur durch die Rechtsprechung selbst im Widerstreit der Rechtsauffassungen herausbilden. Die Dienstaufsicht über das Oberste Gericht ist künftig in die vom Ministerium der Justiz wahrzunehmende Justizverwaltung zu übertragen.

4.2.2.3. Organisation der mittleren und unteren ordentlichen Gerichte

Bei der Neuordnung der mittleren und unteren Gerichtsinstanzen ist — in Abweichung von der in der BRD vorhandenen vierstufigen Gliederung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ierzulande gemachten Erfahrungen an einer dreistufigen Gliederung der Gerichtsebenen festzuhalten. Die Aufteilung in zwei unterschiedliche Eingangsgerichte (Amts- und Landgerichte) mit entsprechend gespaltenen Rechtsmittelzügen ist nicht zwingend erforderlich und auch in absehbarer Zeit nur schwer zu verwirklichen.

Ein Anliegen der Neuordnung des Gerichtssystems muß es im Interesse seiner Funktionsfähigkeit sein, den damit verbundenen Aufwand so gering wie möglich zu halten und Änderungen auf das notwendige Maß zu beschränken. Die derzeit bestehenden Kreisgerichte sollten grundsätzlich als erstinstanzliche Gerichte — an ihrem derzeitigen Sitz und für ihren bisherigen Einzugsbereich — erhalten bleiben, auch wenn sich die Territorien der Kreise ändern. Eine Deckungsgleichheit der Verwaltungs- und Gerichtsbezirke ist nicht erforderlich. Als Gerichte zweiter Instanz können vorerst weiterhin die Bezirksgerichte fungieren, wobei im Zuge der Länderbildung ihre Zusammenführung zu Oberlandesgerichten zu erwägen ist.

Anzustreben ist damit folgende Konzeption:
— Es besteht ein einheitliches Eingangsgericht. Eine Heranziehung an ein übergeordnetes Gericht bzw. eine Anklageerhebung beim übergeordneten Gericht ist unter Beachtung

des Gleichheitsgrundsatzes und der Gewährleistung des gesetzlichen Richters nicht mehr zulässig.

Die Besetzung des Eingangsgerichts (ein Einzelrichter oder ein Berufsrichter und zwei Schöf(en) entspricht der gegenwärtigen Besetzung der Kreisgerichte. Möglichkeiten der Kammerbesetzung durch den Einzelrichter, vor allem in Zivilsachen, sind zu prüfen.

— Das übergeordnete Gericht ist grundsätzlich Berufungs- und Beschwerdegericht. Es entscheidet in der Besetzung mit drei Berufsrichtern.

— Es wird das Rechtsmittel der Revision eingeführt (anstatt der bisherigen Kassation). Revisionsgericht ist das Oberste Gericht, später die jeweiligen Bundesgerichte. Der Revisions Senat entscheidet in einer Besetzung von drei oder fünf Berufsrichtern.

4.2.4. Gliederung von Fachgerichtsbarkeiten

Bei der schrittweisen Schaffung nebe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bestehender Fachgerichtsbarkeiten werden diese analog ihrer Organisation in der BRD zu gliedern sein. Auf unterer Ebene werden unter Beachtung der Konzentration Verwaltungs-, Sozial-, Arbeits- und Finanzgerichte zu schaffen sein, die aus den anfänglich i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zu bildenden speziellen Spruchkörpern hervorgehen sollten (vgl. 4.2.1.).

Als Gerichte zweiter Instanz sind jeweils Obergerichte einzurichten, deren territorialer Zuständigkeitsbereich sich an den künftigen Ländern orientieren, nicht aber zwingend mit diesen übereinstimmen muß.

Sollten bereits vor der staatlichen Vereinigung Fachgerichtsbarkeiten geschaffen werden, wäre es wenig sinnvoll, für die verbleibende Zeit der staatlichen Eigenständigkeit noch jeweils Oberste Gerichtsorgane zu schaffen. Die höchstgerichtliche Rechtsprechung könnte dann durch spezielle Spruchkörperchaften des (bestehenden) Obersten Gerichts wahrgenommen werden.

4.2.5. Gesellschaftliche Gerichte (vorergerichtliche Schlichtung)

Die gesellschaftlichen Gerichte als rechtsprechende Organe können künftig keinen Bestand mehr haben. Das sich in ihrer Tätigkeit ausdrückende Engagement weiterhin zu erhalten, zu fördern und für sein Wirken neue Formen zu finden ist ein wichtiges Anliegen demokratischer Justizentwicklung. Es muß künftig Formen geben, die eine vor- und außergerichtliche Schlichtung ermöglichen.

In den Betrieben sollten anstelle der Konfliktkommissionen mit ihren bisherigen Zuständigkeiten und Befugnissen Schiedsstellen für die Klärung von Arbeitsstreitigkeiten geschaffen werden. In den Wohngebieten könnten bestimmte Aufgaben der bisherigen Schiedskommission durch Schiedsmänner oder Schiedsstellen wahrgenommen werden. Weitergehende Aufgaben, wie sie bisher den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übertragen waren (Entscheidung über Vergehen, Verfehlungen und Ordnungswidrigkeiten, Schulpflichtverletzungen), müßten entfallen.

4.2.3. Stellung des Richters und Gewährleistung seiner Unabhängigkeit

Die bisher zwar verfassungsrechtlich deklarierte, aber vielfach unterlaufene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ist künftig strikt zu gewährleisten. Die sachliche Unabhängigkeit des Richters hat zu sichern, daß auf ein Gerichtsverfahren oder eine Gerichtsentscheidung — außerhalb prozessualer Rechte und Pflichten — keinerlei Einfluß ausgeübt wird. Eine Mißachtung dessen muß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nach sich ziehen.

Die persönliche Unabhängigkeit der Richter kann nur durch Einführung der Lebenszeitstellung gesichert werden. Vor der Bestellung als „Richter auf Lebenszeit“ sollte der Betreffende zunächst in das Dienstverhältnis „Richter auf Probe“ berufen werden.

Die Gewährleistung richterlicher Unabhängigkeit schließt ein, den Richter auch materiell sicherzustellen. Ein Richter muß so bezahlt werden, daß er auch finanziell unabhängig ist und jedweder Eingriff in seine Rechtsposition vermeden wird. Die bisherige Besoldung wird dem nicht gerecht. Der Prozeß de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muß mit einer Verbesserung der sozialen Stellung des Richters einhergehen und dazu führen, daß das Richteramt auch hierzulande als höchstes juristisches Amt von der Gemeinschaft anerkannt und auch so, d. h. bedeutend höher als gegenwärtig, vergütet wird. Es ist kurzfristig eine wesentliche Erhöhung der Gehälter der Richter anzustreben. Danach muß sich schrittweise unter Beachtung der wirtschaftlichen Konditionen der Vereinigung eine Annäherung an die in der BRD gezahlten Gehälter vollziehen.

4.2.4. Mitwirkung von ehrenamtlichen Richtern

Die hierzulande stärkere Einbindung ehrenamtlicher Richter in die Rechtsprechung im Vergleich zur Rechtspflege der BRD kann für eine gesamtdeutsche Gerichtsverfassung Vorbild sein. Sinnvoll wäre eine differenziertere Einbeziehung ehrenamtlicher Richter. So sollten im Arbeitsrecht und bei einigen Familienrechtsachen (insbesondere in Erziehungsrechtsachen und Adoptionsverfahren) weiterhin Schöffen einbezogen werden, während bei anderen Streitigkeiten, vor allem im Zivilrecht, auf ihre Mitwirkung verzichtet werden kann.

4.2.5. Staatsanwaltschaft

Die bisherige Stellung der Staatsanwaltschaft als eigenständiges, zentral geleitetes Rechtspflegeorgan kann nicht mehr aufrechterhalten werden. Eine zentralisiert geleitete, übermächtige Staatsanwaltschaft widerspricht grundlegenden Vorstellungen von einer rechtsstaatlichen Justiz. Die Staatsanwaltschaft ist in die Justizverwaltung einzuordnen. Der Generalstaatsanwalt muß deshalb aus seiner bisherigen Unterstellung unter den Staatsrat herausgelöst und in der Dienstaufsicht dem Minister der Justiz unterstellt werden. Den künftigen Länderjustizministern ist die Dienstaufsicht über die Staatsanwaltschaft in den Ländern zu übertragen:

Die Behörden der Staatsanwaltschaft sind künftig — analog der Ordnung in der BRD — auf der jeweiligen Ebene den Gerichten beizugeben, d. h.

- beim Obersten Gericht die General(bundes)anwaltschaft,
- bei jedem Oberlandesgericht eine Generalstaatsanwaltschaft des Landes,
- bei jedem Eingangsgericht (Kreisgericht) eine Staatsanwaltschaft.

Die Aufgaben der Staatsanwaltschaft sind künftig grundsätzlich auf das Strafverfahren zu begrenzen. Die ihr im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verfahren, im Verfahren zur gerichtlichen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sowie in den Verfahren vor den Beschwerdekommissionen für Sozialversicherung gesetzlich eingeräumten — in der Praxis aber nur bescheiden wahrgenommenen Befugnisse — können nicht mehr aufrechterhalten werden. Mit der schrittweisen Schaffung eines umfassenden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und der damit verbundenen Gesetzlichkeitskontrolle durch die Gerichte entfallen bei der Staatsanwaltschaft zunehmend die ihr bislang obliegenden Aufgaben der Allgemeinen Gesetzlichkeitsaufsicht.

4.2.6. Freiwillige Gerichtsbarkeit

Die bisher vor allem von den Staatlichen Notariaten und von der Jugendhilfe wahrgenommenen, unter die Freiwillige Gerichtsbarkeit fallenden Angelegenheiten, die Entscheidungscharakter haben, sind auf die Gerichte (zurück) zu übertragen. Das betrifft

- Nachlassangelegenheiten,
 - Vormundschafts- und Pflegschaftssachen für Volljährige und Minderjährige,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der Eltern bei der Ausübung des Erziehungsrechts,
 - Registersachen (Handelsregister, Vereinsregister, Genossenschaftsregister, Güterrechtsregister, Schiffsregister).
- Bei Erwägungen, auch die Führung des Grundbuchs in die gerichtliche Zuständigkeit zurückzugeben, sollte Beachtung finden, daß sich die Zusammenlegung des Grundbuchs mit dem Kataster im Bereich des Liegenschaftsdienstes bewährt hat und nicht ohne Grund aufgegeben werden sollte. Es muß nur gesichert sein, daß das Grundbuch ordnungsgemäß geführt wird und dessen guter Glaube gewährleistet ist. Bestimmungen im geltenden Recht, die dem entgegenstehen, sind aufzuheben.

Die Führung des Vereinsregisters wurde bereits durch das Vereinigungsgesetz den Kreisgerichten übertragen. Die Register für private Unternehmen und für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werden beim Staatlichen Vertragsgericht geführt. Mit seiner Überführung in die ordentliche Gerichtsbarkeit sind diese Register durch die jeweiligen Kreisgerichte mit zu übernehmen.

Der Wirkungskreis des Notars ist künftig auf Angelegenheiten der „vorsorgenden“ Rechtspflege, die keinen Entscheidungscharakter tragen (Beglaubigungs- und Beurkundungsangelegenheiten), zu beschränken.

4.2.7. Notariatsorganisation

Aus der Rückübertragung der zu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zählenden Angelegenheiten in die gerichtliche Zuständigkeit ergeben sich Konsequenzen für die künftige Notariatsorganisation. Die Staatlichen Notariate werden, solange dieser Schritt nicht vollzogen ist, zunächst mit ihrer derzeitigen sachlichen Zuständigkeit fortbestehen.

Die Notariatsorganisation ist in einem schrittweisen Prozeß umzugestalten, der dazu führt, daß die Staatlichen Notariate mit den von ihnen bislang übertragenen Aufgaben mit Entscheidungsfähigkeit in die Gerichte eingehen und die Aufgaben der vorsorgenden Rechtspflege künftig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wahrgenommen werden. Dabei ist zu prüfen, ob als Notare in eigener Praxis sog. Nur-Notare oder Rechtsanwälte mit Notariatsbefugnis (Anwaltsnotare) bestellt werden. Beide Varianten sind denkbar; sie entsprechen den Notariatsordnungen in den Ländern der BRD. Es sollte den künftigen Ländern überlassen bleiben, in welcher Form das Notariat zu organisieren ist.

Nicht in Betracht kommen Staatliche Notariate mit der ausschließlichen Zuständigkeit für Beurkundungen und Beurlaubungen.

Der Notar als Träger eines öffentlichen Amtes und unabhängiges Organ der Rechtspflege ist künftig von der Landesjustizverwaltung für einen bestimmten Bezirk (Bereich eines Oberlandesgerichts) auf Lebenszeit zu bestellen. Seine Amtsführung unterliegt der Dienstaufsicht durch die Justizverwaltung. Für den Bereich eines Oberlandesgerichtsbezirks sind Notariatskammern zu bilden.

4.2.2. Rechtsanwaltschaf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enorm zunehmenden Bedarfs an rechtsanwaltlicher Tätigkeit für die Bürger und für andere Auftraggeber, vor allem durch die Einführung marktwirtschaftlicher Strukturen, bedarf es der spürbaren Erhöhung der Anzahl der Rechtsanwälte und der zunehmenden Spezialisierung ihrer Tätigkeit. Gesichert werden muß, daß jeder Auftraggeber kurzfristig einen Anwalt seines Vertrauens mit der Wahrnehmung seiner Interessen beauftragen kann. Das erfordert, die Anwaltschaft weiter personell zu stärken und im erforderlichen Maße auch außerhalb der DDR zugelassenen Rechtsanwälten ein Tätigwerden zu ermöglichen.

Zu sichern ist, daß jeder Jurist, der den gesetzlichen Anforderungen genügt, freien Zugang zur Rechtsanwaltschaft hat und selbst entscheiden kann, in welcher Form (Einzelanwalt, Mitglied einer Sozietät oder eines Kollegiums) er seine Tätigkeit ausüben möchte.

Mit der VO über die Tätigkeit und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 eigener Praxis wurde ein erster Schritt zur Reform auf dem Gebiet der Anwaltschaft getan. Jedem Bewerber, der über die in der Verordnung genannten Voraussetzungen verfügt, ist der Rechtsanspruch eingeräumt. Rechtsanwälte werden zu können. Die Möglichkeit der Rechtsanwaltskollegen, durch die Selbstzulassung Einfluß auf die Anzahl der Rechtsanwälte nehmen zu können, wurde damit überwunden.

Die Zulassung zum Rechtsanwalt ist Angelegenheit der Justizverwaltung. Sie sollte zunächst noch — auch nach Bildung der Länder — beim Minister der Justiz verbleiben, da vorerst, schon aus rein praktischen Gründen, an einer Zulassung für alle Gerichte (der DDR) festgehalten werden soll. Später wird die Zulassungsbefugnis den zu bildenden Länderjustizministerien zu übertragen sein.

Für die Organisation der Rechtsanwaltschaft und zur Sicherung ihrer Selbstverwaltung sind Rechtsanwaltskammern zu bilden. Bestimmte Befugnisse, die bisher bei den Rechtsanwaltskollegen lagen, sind für das jeweilige Territorium den Kammern zu übertragen. So wird es den Kammern als Körperschaften öffentlichen Rechts obliegen, die Interessen aller Rechtsanwälte des Territoriums zu vertreten, bei der Zulassung von Rechtsanwälten mitzuwirken sowie im Auftrag des Ministers der Justiz Disziplinuntersuchungen durchzuführen. Sie haben auch die Verantwortung für die Fortbildung der Rechtsanwälte und für die Einhaltung der Berufspflichten zu tragen. Die territoriale Gliederung der Rechtsanwaltskammern sollte sich an der Länderinteilung orientieren, muß aber keineswegs mit ihr identisch sein.

Die Dienstaufsicht über die Kammern ist den künftigen Länderjustizministerien zu übertragen.

Im Zuge der Reformierung des Anwaltsrechts soll ein Rechtsanwaltsgesetz entstehen, welches sich an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orientiert.

Zu überarbeiten ist ebenfalls das Rechtsanwaltsgebührenrecht. Dabei sind sowohl bisherige Disproportionen zu beseitigen als auch Regelungen für neue Verfahrensarten und für das Tätigwerden von Rechtsanwälten in der Wirtschaft zu treffen.

Analog bundesdeutscher Regelungen sollten auch ein Rechtsberatungsgesetz und ein Beratungshilfsgesetz ausgearbeitet werden. Dies scheint insbesondere erforderlich, um künftig auch sozial schwachen Bürgern die Möglichkeit der Rechtsberatung und Vertretung zu gewährleisten und um exakt fest-

zulegen, wer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zur Rechtsberatung befugt ist.

Um kurzfristig auch außerhalb der DDR zugelassenen Rechtsanwälten hierzulande Wirkungsmöglichkeiten zu verschaffen, ist eine Rechtsvorschrift vorzubereiten, die bei Vorliegen bestimmter Voraussetzungen die Errichtung eines Büros in der DDR und das Tätigwerden im Zusammenwirken mit einem in der DDR zugelassenen Rechtsanwalt gestattet. Ein weiterer, im Zuge des Vereinigungsprozesses zu vollziehender Schritt wird die Gewährung einer Dienstleistungs- und Niederlassungsfreiheit auf der Grundlage der im EG-Raum üblichen Normen sein.

4.2.3.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Der schiedsgerichtlichen Rechtsprechung zur Beilegung von kommerziellen Streitigkeiten aus dem Wirtschaftsverkehr sollte künftig ein breiterer Raum eingeräumt werden. Bisher unterlagen Streitigkeiten aus dem inneren Wirtschaftsverkehr nach geltendem DDR-Recht ausschließlich der Staatlichen Vertragsgerichtsbarkeit. Das Tätigkeitsfeld des bei der Kammer für Außenhandel im Jahre 1954 gebildeten ständigen Schiedsgerichts beschränkte sich folglich auf die Entscheidung von Streitigkeiten aus mit internationalen Wirtschaftsverträgen zusammenhängenden Rechtsverhältnissen.

Mit der Auflösung der Vertragsgerichte und der Übertragung der Rechtsprechung auf dem Gebiet des Wirtschafts- und Handelsrechts auf die ordentlichen Gerichte sollte die Schiedsgerichtsbarkeit als alternative Streitbeilegungsmethode auch für den nationalen Wirtschaftsverkehr zugelassen werden. Dem spezifischen Gegebenheiten des Geschäftsverkehrs unter den Bedingungen einer modernen Marktwirtschaft kann mittels der Schiedsgerichtsbarkeit oftmals besser entsprochen werden als durch ein Gerichtsverfahren.

Die Zuständigkeit des Schiedsgerichts kann von den Vertrags- und Streitpartnern durch eine gesetzlich erlaubte schriftliche Schiedsvereinbarung (fakultative Schiedsgerichtsbarkeit) oder durch Rechtsvorschriften (obligatorische Schiedsgerichtsbarkeit) begründet werden.

Zur rechtlichen Regelung der Schiedsgerichtsbarkeit ist es erforderlich, im Rahmen einer Novellierung der ZPO Regelungen zu den prozessualen Voraussetzungen für die Schiedsgerichtsbarkeit zu schaffen. Längerfristig wird im Rechtsangleichungsprozeß eine Revision der geltenden BRD-Vorschriften (§ 1023 ff. ZPO/BRD) sowie der DDR-SCVO durch Erarbeitung moderner Vorschriften über die nationale Schiedsgerichtsbarkeit sowie eines Gesetzes zur Einführung des UNICTRAL-Modellgesetzes über die Internationale Handelsschiedsgerichtsbarkeit vom 21. Juni 1985 angestrebt.

4.3. Prozeßrecht

4.3.1. Zivilprozeßrecht

Ausgehend von den neu zu regelnden gerichts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sind weitergehende zivilprozessuale Regelungen erforderlich.

Zur Eingliederung der Wirtschaftsrechtsprechung ist eine Novellierung der ZPO/DDR anzustreben. Bei der Ausarbeitung einer ZPO-Novelle sind neben de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allgemeinen Verfahrensbestimmungen des Zivilprozesses auch Verfahrensregelungen zur Durchführung von Wirtschafts- und Handelsachen auszuarbeiten.

Gleichzeitig damit sind all die Bestimmungen zu beseitigen, die einseitig dem Schutz sozialistischer Betriebe dienen oder mit rechtsstaatlichen Verfahrensgrundsätzen nicht vereinbar sind. Das betrifft u. a. die Beseitigung der Mitwirkungsrechte Dritter und die Rücknahme des Untersuchungsgrundsatzes, wieweil in der Praxis trotz unterschiedlicher Ansatzpunkte schon angenäherte Verfahrensmaximen bestehen.

Das Kassationsverfahren sollte durch ein Revisionsverfahren ersetzt werden.

Abgesehen von ihren ideologischen Übertragungen hat sich die geltende Zivilprozeßordnung als eine übersichtliche, verständliche — und insoweit durchaus vorbildhafte — Prozeßrechtskodifikation bewährt.

4.3.2. Strafprozeßrecht

Mit der geltenden StPO besteht ein Gesetz, das für jeden am Strafverfahren Beteiligten überschaubare Regelungen bereithält. Aus diesen Gründen sollten auch die Gesetzgebungsarbeiten zur Neufassung der StPO weitergeführt und abgeschlossen werden. Falls ihre Verabschiedung infolge des Tempos des Vereinigungsprozesses nicht möglich ist, sollte angestrebt werden, die darin enthaltenen Regelungsvorschläge in eine gemeinsame StPO einzubringen.

Regelungskomplexe der StPO/DDR, die — ungeachtet einer

VIII

Neue Justiz 6-90

veränderten Gerichtsstruktur — für ein künftiges einheitliches Strafverfahrensrecht eingebracht werden könnten und sollten, sind insbesondere

- die Übersichtlichkeit der Struktur und die Gliederung der StPO, die dem Ablauf des Strafverfahrens entspricht,
- die Abgrenzung der Verfahrensstadien,
- die den besonderen Bestimmungen zum Ablauf des Strafverfahrens vorangestellten allgemeinen Bestimmungen mit ihrer Geltung für alle Stadien des Verfahrens zum Beweisrecht, zum Recht auf Verteidigung, zu den strafprozessualen Zwangsmaßnahmen u. a.,
- der Zweinstanzenweg,
- die klare Abgrenzung der Zuständigkeiten der Strafrechtspflegeorgane.

Wenn davon ausgegangen werden kann, daß auch nach de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die StPO/DDR für einen z. Z. unbestimmbaren Zeitraum bis zum Erlaß einer einheitlichen deutschen Strafprozeßordnung fortbestehen kann, ergibt sich die Notwendigkeit, — ausgehend von neuen gerichts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und auf Grund der bei den bisherigen Gesetzgebungsarbeiten gewonnenen Erkenntnisse — innerhalb eines relativ kurzen Zeitraums (bis Ende 1990) eine StPO-Novelle einzureichen. Diese Novelle sollte u. a. enthalten:

- Anpassung an die neue Gerichtsstruktur — Gerichtsaufbau in Abstimmung mit dem GVG,
- Ausbau der Aufgaben und Befugnisse des Gerichts im Ermittlungsverfahren,
- Neugestaltung des Rechts auf Verteidigung, der Stellung des Geschädigten und des Beweisrechts sowie weiterer Regelungen,
- die Einführung der Revision anstelle der bisherigen Kassation,
- Regelungen für die Reaktion auf Bagatelldelinquenz, die sich an dem Modell der BRD (§§ 153 und 153 a oder auch § 153 c StPO/BRD) orientieren könnten.

Aus angrenzenden Rechtsbeziehungen können in den Rechtsangleichungsprozeß eingebracht werden:

- Grundsätze zur Verwirklichung von Strafen ohne Freiheitsentzug,
- Grundsätze zum Vollzug der U-Haft auf gesetzlicher Grundlage,
- Rechtsgrundlagen über die Fürsorge für Personen und den Schutz der Wohnung und des Vermögens bei Inhaftierungen.

Derartige Rechtsvorschriften existieren bislang in der BRD nicht.

4.3.3. Verwaltungsgerichtsverfahren

Das Gesetz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vom 14. Dezember 1988 (GBl. I Nr. 29 S. 533) verweist neben den darin enthaltenen Verfahrensbestimmungen auf die entsprechende Anwendung der Zivilprozeßordnung. Eine eigenständige Verwaltungsgerichtsordnung gibt es bislang nicht. Dieser Zustand ist unbefriedigend, da die Konstellation der Beteiligten im Zivilverfahren (Gleichordnung der Rechtssubjekte) anders ist als im Verfahren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akten (im Verwaltungsverfahren besteht eine solche Gleichordnung nicht). Es sollte deshalb mit der Einrichtung einer eigenständigen Verwaltungsgerichtsbarkeit eine Verwaltungsgerichtsordnung geschaffen werden.

4.3.4. Zwangsvollstreckung

Im Zwangsvollstreckungsrecht müssen die sich verändernden Wirtschaftsstrukturen Berücksichtigung finden und im Prozeß der Rechtsangleichung ein den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gen entsprechendes Vollstreckungsrecht geschaffen werden. Die Novellierung der ZPO/DDR erstreckt sich auch auf die Weiterentwicklung der geltenden Vollstreckungsbestimmungen. Das Dispositionsrecht des Gläubigers sollte stärker ausgestaltet werden. Er sollte mit seinem Antrag den Umfang der Zwangsvollstreckungsmaßnahmen bestimmen, wobei er gleichzeitig mit einer neuen Gebührenregelung interessiert werden müßte, eine erfolglose Zwangsvollstreckung nicht weiter zu betreiben. Das Prinzip, daß eine einmalige Antragstellung bis zur Erfüllung des gesamten Anspruchs zu führen hat, ist aufzugeben. Der Antrag auf Einzelvollstreckung ist wieder zuzulassen.

Zu prüfen ist die Einführung der Funktion des Gerichtsvollziehers für die Räumungsvollstreckung und die Vollstreckung in Sachen.

Die Novellierung der ZPO/DDR sollte auch die Frage einschließen, ob es erforderlich ist, die eidesstattliche Versicherung (Offenbarungseid) wieder einzuführen und im dafür er-

forderlichen Verfahren auszugestalten (in der ERD z. Z. 1,5 Mio. Verfahren jährlich). Beseitigt werden müßte die Verpflichtung, zunächst ins Arbeitsloskommen zu vollstrecken

Dem Vollstreckungsschutz für Schuldner muß künftig mehr Aufmerksamkeit gewidmet und Härtemaßnahmen entgegengetreten werden. Es müßten u. a. die pfändungsfreien Beträge verändert (§§ 101, 102 ZPO/DDR), die Pfändung von Arbeitslosenunterstützung geregelt und der Vollstreckungsschutz unabhängig von der Zumutbarkeit des Gläubigers (§ 131 Abs. 2 Ziff. 3 ZPO/DDR) bestimmt werden. Dazu gehört auch die Überlegung, ob künftig das einstufige Mahnverfahren noch vertretbar sein wird.

Die Gläubigerrechte (Schutz) sollten neu bestimmt werden:

- Auskunft über Schuldner zur Vermeidung von Zwangsvollstreckungskosten aus einem einzureichenden öffentlichen Schuldnerverzeichnis,
- Änderung der Rangfolge (§ 105 ZPO) zugunsten des erstpfindenden Gläubigers,
- Versteigerung zum Höchstgebot bei Mobilien anstelle Verkaufs zum Schätzwert (§ 122 ZPO).

4.3.5. Insolvenzrecht

Mit der Zivilprozeßordnung vom 19. Juni 1975 (GBl. I Nr. 37 S. 533) wurde die Konkursordnung vom 10. Februar 1877 aufgehoben. Es gilt die VO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18. Dezember 1975 (GBl. I Nr. 1 S. 5), die nicht auf die Insolvenz mittlerer und größerer Unternehmen ausgerichtet ist. Die VO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ist als Zwischenlösung zunächst so auszubauen, daß sie den Anforderungen der Praxis entspricht. Die so geschaffene Regelung sollte solange bestehen bleiben, bis ein neues gesamtdeutsches Insolvenzrecht erarbeitet worden ist, für das seit Jahren Vorarbeiten in der BRD geleistet worden sind. Die DDR sollte sich an diesen Gesetzgebungsarbeiten beteiligen. Die andere mögliche Zwischenvariante, Wiedereinführung der alten Konkursordnung, sollte nicht vorgesehen werden, da dieses Gesetz auch nach Einschätzung der Juristen der BRD nicht mehr zeitgemäß ist.

4.4. Materielles Recht

4.4.1.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Wirtschaftsrecht

Ein modernes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ist unerläßliche Voraussetzung für die Herausbildung und Tätigkeit von Unternehmen, die den Bedingungen der Marktwirtschaft entsprechen. Die DDR muß gegenwärtig auf fortgehendes Rechtsrecht zurückgreifen. Das betrifft insbesondere das HGB, das GmbH-Gesetz, das Aktiengesetz. Diese Gesetze wurden in der DDR den Erfordernissen eines modernen Unternehmensrechts nicht angepaßt. Sie gelten in der vor dem 8. Mai 1945 geltenden Fassung fort.

Beachtlich ist ferner, daß die für das Gesellschaftsrecht relevanten Bestimmungen des BGB im Zivilgesetzbuch der DDR keine Entsprechung gefunden haben. Das gilt vor allem für die OHG und die KG, für die im HGB auf die Bestimmungen des BGB über die Gesellschaft verwiesen wird, aber auch für bestimmte Rechtsfragen in Bezug auf die Kapitalgesellschaften. Auch hier ist mit dem Außerkraftsetzen des BGB durch das Einführungsgesetz zum ZGB eine komplizierte Rechtsituation eingetreten, die durch Inkraftsetzung von § 705 ff. BGB entsprechenden Bestimmungen überwunden werden muß.

In der DDR ist ein funktionsfähiges Wirtschaftsvertragsrecht zu schaffen, das den Unternehmen Vertragsfreiheit gewährleistet.

Für beide deutsche Staaten müssen hierfür weitgehend einheitliche Regelungen gelten. Mit dem Übergang zur Marktwirtschaft hat das noch geltende Vertragsgesetz vom 25. März 1982 (GBl. I Nr. 14 S. 293) seine Existenzberechtigung verloren; es ist aufzuheben. Bis zur Schaffung einer einheitlichen Rechtsordnung bedarf es Übergangsregelungen (vgl. 5.1.1.2.). Das Ziel muß darin bestehen, ein einheitliches Vertragsrecht (Schuldrecht) zu schaffen. In der Bundesrepublik werden dazu gegenwärtig Vorarbeiten durch Überarbeitung der betreffenden Bestimmungen des BGB vorbereitet.

4.4.2. Zivilrecht

Auf dem Gebiet des Zivilrechts sollte das ZGB der DDR als Recht für den Bereich der Bürgerbeziehungen zunächst bestehen bleiben. Das erfordert eine baldige Novellierung des Gesetzes unter folgenden Gesichtspunkten:

- Aufhebung der Präkambel und aller allgemeinen Aufgaben- und Generalklauseln, die auf die Weiter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Moral usw. Bezug nehmen;

— Aufhebung aller Rechtsvorschriften, die Sonderregelungen für das sozialistische Eigentum enthalten.

Im Bereich des Vertragsrechts sind zum Kauf ergänzende Regelungen unter den Gesichtspunkten des Verbraucherschutzes vorzusehen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Haustürgeschäfte und Abzahlungsgeschäfte).

Auf dem Gebiet des Wohnungsmietrechts muß in der DDR für eine abschbare Übergangszeit das soziale Wohnungsmietrecht bestehen bleiben. Allerdings sind die Mietpreise so zu gestalten, daß sie eine wirtschaftlich erforderliche und sozial vertretbare Mietehöhe erreichen. Gleichzeitig sind Maßnahmen und Anreize zur Sanierung der privaten Altbausubstanz zu schaffen. Zu prüfen ist, ob nach Schaffung einer weitgehend ausreichenden Wohnungssubstanz an der staatlichen Zuweisungspraxis festgehalten werden kann oder ob nicht dem Vermieter dann die freie Auswahl des Vertragspartners zu ermöglichen ist.

Im Eigentumsrecht (Sachenrecht) sind alle Regelungen unter dem Gesichtspunkt zu überprüfen, ob sie einen freien Wirtschaftsverkehr ermöglichen und die erforderlichen Sicherungsrechte an beweglichen Sachen, Forderungen und Grundstücken ermöglichen. Das schließt ein, alle Formen des Eigentums verkehrsfähig zu gestalten und — unter Aufgabe der Sonderungen bestimmter Eigentumsformen — zu einem einheitlichen Eigentumsbegriff zu gelangen.

Im außervertraglichen Haftungsrecht ist eine Rechtsangleichung durch Weiterentwicklung vorzunehmen. Als erste Maßnahme könnte die Produkthaftung eingeführt werden, die auf EG-Richtlinien beruht.

Im weiteren Verlauf geht es darum, das Haftungsrecht in beiden Staaten zu harmonisieren. Vorerst können unterschiedliche Haftungsnormen hingenommen werden.

Das ZGB-Erbrecht ist partiell zu novellieren, um bestimmte Nachlassverfügungen wieder zuzulassen (Erbvertrag, Vor- und Nacherbschaft). Eine Erweiterung der Erbordnungen (3. Ordnung) wird nicht angestrebt. Im Übrigen ist die Anwendung des DDR- bzw. BRD-Erbrechts auf Erbrechtsfälle durch eine entsprechende kollisionsrechtliche Regelung praktikabel zu machen. Erbansprüche sind gegenseitig anzuerkennen.

4.4.3. Familienrecht

Bei der Angleichung des Familienrechts sind folgende Aspekte zu beachten:

— Als erste Maßnahme sind politisch einseitig angelegte Bestimmungen des FGB ersatzlos zu streichen.

Im Zusammenhang mit der Herstellung der Wirtschaftsunion sind Anpassungen und Annäherungen an das z. Z. in der BRD geltende Recht auf dem Gebiet des Unterhalts und des ehelichen Güterrechts vorzunehmen. In Betracht kommen u. a.:

- die Schaffung einer gesetzlichen Rechtsgrundlage für die Anpassung von titulierten Unterhaltsansprüchen an wirtschaftliche Entwicklungen (ähnlich § 1612 a BGB);
- die Befreiung des nachehelichen Unterhalts von allen Resten administrativen Inhalts und Eröffnung der Möglichkeit, auch für bereits geschiedene Ehen nachträglich Unterhalt zuzusprechen;
- die volle Zulässigkeit güterrechtlicher Vereinbarungen zwischen Ehegatten sowie Eröffnung der Möglichkeit, einen der in der BRD geltenden Güterstände zu vereinbaren;
- die Erweiterung der gerichtlichen Möglichkeiten zur Aufhebung der ehelichen Eigentumsgemeinschaft durch Übernahme einiger wichtiger Prinzipien aus dem BGB.

Zur Lösung DDR-interner Konflikte und zur Vorbereitung erster Schritte in Richtung auf die Transformation der UNO-Konvention über die Rechte des Kindes sind Veränderungen des Umgangsrechts des FGB vorzunehmen. Im Gleichklang dazu sind die Rechte des nichterziehungsberechtigten Elternteils zu erweitern. Die Gesamtsituation der Transformation der UN-Konvention über die Rechte des Kindes kann erst nach gemeinsamer Positionsbestimmung mit dem Bundesjustizministerium,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Rechte des nichtehelichen Vaters, näher bestimmt werden.

Die völlige Angleichung des Familienrechts in allen Bereichen ist ein Prozeß, der unter Beachtung bestehender Rechtsverhältnisse und der Zielstellungen der künftigen Familiengesetzgebung zum BGB schrittweise über längere Zeiträume zu vollziehen ist. Dabei muß berücksichtigt werden, daß das Familienrecht der BRD selbst in der Entwicklung begriffen ist und zum Teil noch Bestimmungen enthält, die in der DDR seit Jahrzehnten durch neues Recht ersetzt wurden und die u. S. Besatzungsrechte bzw. Gesetze des sog. Dritten Reichs zumal kaum wieder neu in Kraft gesetzt werden können.

4.4.4. Arbeitsrecht

Dem Sozialstaatsprinzip folgend ist durch die DDR abzusichern, daß der Kündigungsschutz gewährleistet wird. Bei Nichterreichern der Vollbeschäftigung sind Arbeitsförderungsmaßnahmen und ein System der Arbeitslosenversicherung und -unterstützung zu schaffen. In der Übergangsphase sollten bereits die bundesdeutschen Regelungen des kollektiven Arbeitsrechts, wie Tarifautonomie, Betriebsverfassung und Wahl der Betriebsräte sowie die Unternehmensmitbestimmung eingeführt werden.

Das Kündigungsrecht der DDR ist den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gen anzupassen. Die Rechte von Betriebsräten bei Kündigung sind im Betriebsverfassungsgesetz auszugestalten. Das Kündigungsschutzrecht sollte durch das bundesdeutsche Arbeitsförderungsrecht ergänzt werden.

Es sollte eine einheitliche Kodifizierung des Rechts des Arbeitsverhältnisses auf der Grundlage des AGB und der bundesdeutschen Entwürfe gemeinsam erstellt werden.

Die zum Kommunal- und Sozialrecht gehörenden Rechte der werktätigen Frauen sollten erhalten bleiben. Die Kostenträgerschaft durch die Sozialversicherung wäre dabei aufrechtzuerhalten. Diese Bestimmungen könnten als Modell für eine gesamtdeutsche Regelung dienen.

4.4.5. Strafrecht

Die Rechtsangleichung auf strafrechtlichem Gebiet zielt darauf, in einem mehrstufigen, längerfristigen Prozeß ein einheitliches deutsches Strafrecht hervorzubringen. Es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ß auch in einem einheitlichen deutschen Bundesstaat für eine begrenzte Zeit verschiedene Strafrechtsordnungen nebeneinander bestehen werden.

Dringender gesetzgeberischer Handlungsbedarf besteht darin, alle Strafbestimmungen abzuschaffen, die der Erhaltung des monolithischen Machtapparates dienen und die administrativ-repressiven Charakter tragen. Konsequenz sind die in der Konvention über die zivilen und politischen Rechte übernommenen Verpflichtungen im nationalen Strafrecht der DDR zu berücksichtigen. Der vorliegende Entwurf des 6. StAG ist zur Verwirklichung dieses Zieles kurzfristig zu überarbeiten und unverzüglich der Volkskammer zuzuleiten.

In Vorbereitung auf die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ist ein gleichberechtigter Schutz aller Eigentumsformen zu gewährleisten. Darüber hinaus sind weitere Strafbestimmungen aufzuheben bzw. zu ändern, die der angestrebt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widersprechen, z. B. Normen zur Durchsetzung der Planwirtschaft oder der Preisbindung. Neu zu schaffen sind Strafbestimmungen, die zum Schutz ein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zur Verfolgung neuer oder veränderter Kriminalitätserscheinungen (z. B. organisiertes Verbrechen, Suchtmittelmissbrauch) notwendig sind.

- Bei weiteren Angleichungsmaßnahmen, insbesondere bei der Gestaltung des Allgemeinen Teils des StGB (z. B. Straftatbegriff, Schuldkonzeption, Rückfallregelungen, Maßnahmen-system);
 - der Verfolgung der Bagatelldelinquenz;
 - der Umsetzung völkerrechtlicher Verpflichtungen im Strafrecht (z. B. Söldnerkonvention, Folterkonvention, Suchtmittelkonvention);
 - der Gestaltung des Sexualstrafrechts;
 - dem Ausbau des strafrechtlichen Schutzes im Zusammenhang mit der Entwicklung von biomedizinischen Verfahren, Biotechnologie, Umwelt- und Datenschutz
- ist ein koordiniertes Zusammenwirken von Experten beider deutscher Staaten anzustreben; Erfahrungen mit bestehenden Regelungen sind zu verallgemeinern.

Einer Überarbeitung und schrittweisen Angleichung bedarf auch das Ordnungswidrigkeitsrecht. Es sind gesetzliche Voraussetzungen für die Erhöhung der Rechtsstaatlichkeit des Verfahrens zu schaffen, insbesondere auch durch Einführung der gerichtlichen Nachprüfung. Das Sanktionssystem des OWG ist zu überarbeiten. Eine erhebliche Anzahl der auf der Grundlage des OWG erlassenen Ordnungstrafbestimmungen, einschließlich in der OWVO und solcher Ordnungstrafbestimmungen, die zur Sicherung der Planwirtschaft und administrativer Leitungsstrukturen dienen, ist aufzuheben.

4.4.6. Verwaltungsrecht

Die bisherige funktionelle Ausrichtung des Verwaltungsrechts, als staatliches „Leitungsinstrument“ einer zentralistisch-administrativ geführten Gesellschaft zu dienen, hat zur Folge, daß seine Regelungen größtenteils in den Prozeß der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nicht eingebracht werden können. Die Mehrzahl seiner Regelungen kann bei sich ändernden gesellschaftlichen Verhältnissen keinen Bestand

X

Neue Justiz 6/90

men: haben. Einbringenswert erscheinen aus erster Sicht lediglich jene verwaltungsrechtlichen Regelungen über die Gewährung bestimmter sozialer Leistungen, soweit sie im Rahmen eines sozialen Netzes erhalten bleiben sollen.

Der Prüfung bedarf allerdings, ob die im Zuge der revolutionären Veränderungen neu erlassenen staats- und verwaltungsrechtlichen Regelungen (wie z. B. das Parteiengesetz und das Vereinigungsgesetz) in Inhalt und Form ein rechtsstaatliches Niveau erreicht haben, das es in einer gesamtdeutschen Rechtsordnung zu bewahren gilt.

Die Einführung föderativer Strukturen (Länderbildung) hat Konsequenzen für die Rechtsgestaltung auf verwaltungsrechtlichem Gebiet. Ein großer Teil der zum besonderen Verwaltungsrecht zählenden Bereiche ist in der BRD durch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des Bundes (Art. 73 GG) oder im Rahmen der konkurrierenden Gesetzgebung (Art. 74, 74 a GG) durch Bundesrecht ausgefüllt. Es ist zu prüfen, ob für diese Gebiete, soweit nicht bereits kurzfristig Neuregelungen erlassen wurden, für den Zeitraum bis zu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und damit der möglichen Übernahme bundesrechtlicher Regelungen) noch eigenständige (zentrale) Regelungen geschaffen werden müssen.

Für die verwaltungsrechtlichen Bereiche, die in die Kompetenz der Länder fallen (z. B. Polizei- und Ordnungsrecht, Schulrecht, Kommunalrecht), sollten keine zentralen Regelungen mehr erlassen, sondern die Vorbereitungen dafür getroffen werden, daß die Länder nach ihrer Bildung diese Bereiche gesetzgeberisch ausfüllen können. Hinsichtlich der rechtlichen Gestaltung von Verwaltungsverfahren gehört die Schaffung 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schon seit längerem zu den auf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sstaatlichkeit zielenden Forderungen. Mit d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om 23. Mai 1976 (BGBl. I Nr. 59 S. 1253) verfügt die BRD über ein diese Materie umfassend regelndes Gesetzeswerk.

Beachtlich ist ferner, daß sich im Zuge de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auch die Verwaltungsstrukturen angleichen werden. Zur Überbrückung und Vorbereitung der Verwaltungsorgane auf die neuen Anforderungen wird es für ausreichend, aber zugleich auch für notwendig gehalten, kurzfristig eine gesetzliche Regelung zur Durchführung von Verwaltungsverfahren zu erarbeiten, die den Intentionen des bundesdeutschen Verfahrensgesetzes entspricht und den noch zu beachtenden Besonderheiten der Verwaltungsorganisation hierzulande Rechnung trägt.

4.5. Strafvollzug

Die Reformierung des Strafvollzugs und die Rechtsangleichung auf dem Gebiet des Strafvollzugsrechts müssen dazu führen, die Vollzugsbedingungen in der DDR entscheidend zu verbessern und die Rechtsstellung der Strafgefangenen wesentlich auszubauen. Dazu gehört, durch Änderungen des Strafvollzugsgesetzes die eindeutige Bestimmung der Befugnisse der Mitarbeiter der Vollzugsorgane, speziell hinsichtlich des Eingriffs in Grundrechte der Gefangenen, und die Statuierung des Rechts der Untersuchungs- und Strafgefangenen, Vollzugsmaßnahmen gerichtlich nachprüfen lassen zu können.

Mittelfristig ist die Herauslösung des Strafvollzugs aus dem Ministerium für Innere Angelegenheiten und seine Unterstellung unter die Justizverwaltung anzustreben. Insoweit notwendige Entscheidungen sollten vorbereitet und der Strafvollzug schrittweise im Prozeß der Länderbildung von den zu schaffenden Länderjustizministerien übernommen werden. Unabhängig davon ist zu prüfen, ob daneben ein parlamentarischer oder Regierungsbeauftragter für die Untersuchungshaftanstalten und Strafvollzugseinrichtungen geschaffen werden sollte.

Erforderlich ist, ein Untersuchungshaftvollzugsgesetz auszuarbeiten, das es auch in der BRD noch nicht gibt und deshalb bereits im Hinblick auf eine gesamtdeutsche Regelung gemeinsam vorbereitet werden sollte.

Notwendig ist ferner eine Überarbeitung des Wiedereingliederungsgesetzes. Mit diesem Gesetz könnten sowohl Regelungen als auch Erfahrungen einer staatlich organisierten Wiedereingliederung in der DDR in den Einigungsprozeß eingebracht werden.

5. Stufen der Rechtsangleichung

Der Rechtsangleichungsprozeß zwischen beiden Staaten wird sich nur über mehrere Stufen verwirklichen lassen. Aus jetziger Sicht sind das

- die Vorbereitung und Begleitung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 die Schaffung konföderativer Strukturen und die Einrichtung von Ländern;
- die Vorbereitung der staatlichen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iese Stufen kennzeichnen die Hauptschritte, verlaufen aber nicht versetzt hintereinander und auch nicht nebeneinander, sondern sind sowohl inhaltlich als auch in ihrer zeitlichen Dimension überlagert.

5.1.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Die als ersten Schritt zur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vorgesehene Währungs- und Wirtschaftsunion erfordert die Einführung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der DDR. Die dafür erforderlichen 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sind unverzüglich zu schaffen. Analoges gilt für die im Rahmen einer marktwirtschaftlichen Ordnung notwendigen Maßnahmen der sozialen Sicherung.

Zur Schaffung der Voraussetzungen für eine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sind — in Kooperation mit der BRD — kurzfristig die dafür unbedingt notwendigen gesetzgeberischen Sofortmaßnahmen, die im folgenden umrissen werden, vorzubereiten.

Die zu erlassenden Rechtsvorschriften müssen insbesondere auf

- die Einführung/Durchsetzung der für eine soziale Marktwirtschaft unverzichtbaren Prinzipien und Grundnormen,
- die Sicherung möglichst einheitlicher oder zumindest weitgehend angenäherter Rechtsvorschriften zwischen der DDR und der BRD auf den zentralen Feldern der Wirtschaftsordnung,
- die Verwirklichung des Prinzips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er Rechtssicherheit gerichtet sein.

5.1.1. Gesetzgeberische Maßnahmen im Verantwortungsbereich des MDJ

5.1.1.1.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Um den Anforderungen der Marktwirtschaft gewachsen zu sein, ist eine Anpassung an das moderne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der BRD erforderlich. Das ist schon deshalb geboten, weil dieses Recht weitgehend EG-Recht ist und die BRD keinen Spielraum hat. Es sind deshalb in Anlehnung an die Regelungen der BRD Neufassungen folgender Gesetze zu erarbeiten und der Volkskammer zur Beschlußfassung vorzulegen:

- HGB
 - Aktiengesetz
 - GmbH-Gesetz.
- Bei Übernahme der Steuergesetze der Bundesrepublik müßten zusätzlich in Anlehnung an entsprechende BRD-Gesetze ein
- Umwandlungsgesetz sowie ein
 - Gesetz über die Kapitalerhöhung aus Gesellschaftsmitteln
- vorbereitet werden.

5.1.1.2. Wirtschaftsvertragsrecht

Schaffung eines allgemeinen Vertragsrechts für die wirtschafts- und handelsrechtlichen Beziehungen zwischen den Unternehmen. Dazu ist der Geltungsbereich

- des Gesetzes über Internationale Wirtschaftsverträge (GIW)

auf inländische Rechtsbeziehungen zwischen Unternehmen zu erweitern. Eine Inkraftsetzung der BGB-Bestimmungen wird nicht befürwortet, weil ihre Anwendung ohne die inzwischen entwickelte — für die DDR nicht unmittelbar geltende — Rechtsprechung erhebliche Probleme bereiten würde. Beim GIW handelt es sich um ein modernes Gesetz, das eine brauchbare und inhaltlich akzeptable Schuldrechtsordnung zur Verfügung stellt.

Daneben sind die entsprechenden Teile des HGB an das in der BRD geltende HGB anzupassen.

5.1.1.3. Genossenschaftsrecht

Für die Umstellung der Wirtschaft auf die Marktwirtschaft bedarf es der Novellierung des Genossenschaftsgesetzes von 1899. Dieses Gesetz wurde in der Bundesrepublik bereits 1973 novelliert. Es ist besonders wichtig für Neugründungen von Genossenschaften in der DDR. Seine Wirksamkeit hängt jedoch davon ab, daß Prüfungsverbände geschaffen werden, denen das Prüfungsrecht, das von der obersten Landesbehörde verliehen wird, obliegt. Die Pflichtprüfung der Genossenschaften und die Beratungstätigkeit könnte für eine Übergangszeit durch Wirtschaftsprüfer erfolgen. Der Prüfungsverband ist ein eingetragener Verein. Sonderregelungen des Genossenschaftsrechts bestehen für Kreditgenossenschaften insbesondere bezüglich der Prüfung und der Publizität. Be-

deutsam ist, daß hierzu kein EG-Recht existiert. Zum Genossenschaftsrecht gehört ein funktionsfähiges Genossenschaftsregister, das in einer GenossenschaftsregisterVO geregelt ist.

Im Zusammenhang mit den Kapitalgesellschaften existiert in der BRD Konzernrecht; für Aktiengesellschaften ist es rechtlich geregelt, für GmbH ist es durch die Rechtsprechung entwickelt. Vorbereitet werden soll ein europäisches Konzernrecht. Dazu wurde bereits in den Jahren 1973 bis 1976 eine Richtlinie vorbereitet, die jedoch bisher nicht in Kraft gesetzt wurde.

Darüber hinaus besteht ein Recht der europäischen wirtschaftlichen Interessenvereinigung (EWIV), zu dem es ein deutsches Ausführungsgesetz gibt. Erforderliche Anpassungsmaßnahmen sind mittelfristig zu prüfen.

5.1.1.4. Strafrecht

Zum Schutz vor kriminellen Handlungen im Bereich wirtschaftlicher Tätigkeit sind im Zusammenhang mit der Einführung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die Strafbestimmungen im

- Aktiengesetz,
- GmbH-Gesetz

und in weiteren Nebenbestimmungen (wieder) in Kraft zu setzen bzw. in vorzubereitende Neufassungen einzubringen. Das muß einhergehen mit einer kurzfristigen Novellierung der Strafbestimmungen zum Schutz des Eigentums und der Volkswirtschaft sowie der Vorbereitung strafrechtlicher Regelungen zum Schutz des Kapitals (z. B. Kredit, Subvention, Börse, Konkurs), der (Markt)Wirtschaft (wie Wettbewerb, Unternehmen,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 sowie zur Gewährleistung der Abführungen an den Staat (Steuern).

5.1.1.5 Zivilprozeß- und Zwangsvollstreckungsrecht

Zur Entideologisierung der geltenden zivilprozessualen Bestimmungen, zur Beseitigung investitionsbremsender, insbesondere auf den einseitigen Schutz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ausgerichteter Regelungen und zur Schaffung einer verfahrensrechtlichen Grundlage für Handelsstreitigkeiten ist eine

- Novelle zur Zivilprozeßordnung zu erarbeiten. Gleichzeitig bedarf es de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 VO über die Vollstreckung in Grundstücke und Gebäude und der Bereinigung der bisher ergangenen
- Durchführungsbestimmungen zur ZPO.

5.1.1.6. Insolvenzrecht

Zur Schaffung einer Mindestanforderungen genügenden Insolvenzregelung, ohne die eine marktwirtschaftliche Ordnung nicht auskommt, bedarf es eine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VO über die Gesamtvollstreckung vom 18. Dezember 1975 (B1, I 1976 Nr. 1 S. 3).

5.1.1.7. Rechtsschutzwelterweiterungen

Im Zuge der mit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entstehenden Verhältnisse sind zumindest in zweierlei Hinsicht Rechtsschutzwelterweiterungen erforderlich:

- a) Schaffung von Kammern für Handelsrecht bei den ordentlichen Gerichten

Mit der Auflösung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muß die Übertragung der Aufgaben der Rechtsprechung auf dem Gebiet des Wirtschaftsvertrags- und Handelsrechts auf die ordentlichen Gerichte einhergehen. Hierzu sind in Anlehnung an die Rechtsordnung der BRD die erforderlichen Spruchkörper bei den ordentlichen Gerichten zu bilden. Das muß noch vor der Länderbildung geschehen.

Die dafür erforderlichen Übergangsregelungen sind bis zum 1. Juli 1990 zu schaffen. Zur fachlichen und personellen Absicherung dieser Aufgaben ist weitgehend der Personalbestand der Staatlichen Vertragsgerichte in die Gerichte zu übernehmen. Als Spruchkörper für Handelsachen sind — unter dem Gesichtspunkt der Konzentration — nur bei den für die Bezirksstadt zuständigen Kreisgerichten Kammern zu schaffen. Die derzeit bestehenden Bezirksvertragsgerichte würden im wesentlichen in diese eingehen und könnten an ihrem bisherigen Sitz verbleiben.

Bei den Bezirksgerichten sind als Berufungsinstanz entsprechende Senate einzurichten, wobei es in industriell weniger entwickelten Bezirken ausreichend wäre, für mehrere Bezirke an einem Bezirksgericht einen Senat zu schaffen.

Für di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müßte dann am OG ein Senat geschaffen werden, der aus dem Zentralen Staatlichen Vertragsgericht hervorgehen könnte.

- b) Eröffnung des Gerichtsweges für bestimmte öffentlich-rechtliche Streitigkeiten

Für die Entscheidung von Streitfällen aus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n Angelegenheiten (einschließlich der Gewährung von Renten) sind nach geltendem Recht je nach Versicherungs-träger die Beschwerdekommisionen für Sozialversicherung beim FDGB oder bei der Staatlichen Versicherung zuständig. Das kann nicht mehr aufrechterhalten werden. Auch hat bereits der FDGB zu erkennen gegeben, daß diese Angelegenheiten in die gerichtliche Zuständigkeit zu übertragen sind, weil seine Beschwerdekommisionen nicht mehr arbeitsfähig sind.

Aus rechtsstaatlichen Erwägungen, aber auch, um das entstandene Vakuum auszufüllen, ist die Übernahme der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n Angelegenheiten in die Zuständigkeit der ordentlichen Gerichte kurzfristig zu gewährleisten. Dazu bedarf es der Aufhebung bzw. Änderung von Bestimmungen, die nach geltendem Recht die Zuständigkeit der Beschwerdekommisionen festlegen und deren Verfahren regeln.

Weiterhin ist erforderlich, die Gewährung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bereits jetzt auf den Bereich der Steuern und Abgaben auszudehnen.

Im Rahmen einer kurzfristig vorzulegenden Novelle zum Gesetz über die Zuständigkeit und das Verfahren der Gerichte zur Nachprüfung von Verwaltungsentscheidungen könnte für diese öffentlich-rechtlichen Angelegenheiten die Zulässigkeit des Gerichtsweges geregelt werden.

5.1.1.8. Zivilrecht

Zur Beseitigung der dem alten System verhafteten Regelungen über die Schaffung eines einheitlichen Eigentumsbegriffs und Herstellung der Verkehrsfähigkeit von beweglichen und unbeweglichen Sachen, einschließlich der Vereinbarung von Sicherungsrechten für den Kapital- und Warenverkehr, bedarf es einer

- Novelle des Zivilgesetzbuchs.

Im Interesse des Verbraucherschutzes unter marktwirtschaftlichen Bedingungen sind Regelungen über

-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AGB-Gesetz)
- Haustürgeschäfte
- Abzahlungsgeschäfte zu treffen.

In Anlehnung an EG-Richtlinien ist eine Regelung über die

- Produkthaftung erforderlich.

5.1.1.9. Weitere Sofortmaßnahmen

Neben den bisher aus der Sicht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dargelegten Sofortmaßnahmen sind in kürzester Frist folgende gesetzliche Neuregelungen zu schaffen:

- Reformierung des politischen Strafrechts durch Verabschiedung des 6.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 Überarbeitung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von Ordnungswidrigkeiten,
- ein Gesetz über die Stellung, Aufgaben und Zuständigkeit eines Verfassungsgerichts,
- ein Richtergesetz, das die Unabhängigkeit der Richter garantiert,
- eine Anordnung über Niederlassungsmöglichkeiten außerhalb der DDR zugelassener Rechtsanwälte, um schnell das vorhandene Anwaltsdefizit zu beseitigen.

5.1.2. Gesetzgebungsaufgaben in Verantwortung anderer Organe

Nachfolgende Gesetzgebungsaufgaben sind z. T. sofort, z. T. mittelfristig — ausgehend von der derzeitigen Kompetenzverteilung auf Regierungsebene — federführend durch andere Organe vorzubereiten; das MdF hat daran mitzuwirken. Soweit in der BRD für diese Aufgabengebiete federführend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MJ) zuständig ist, wird darauf hingewiesen. Bei Strukturveränderungen, die im Bereich der Regierung vorgenommen werden, wäre das zu beachten.

5.1.2.1. Grundsatzregelung

Als Rahmen- und Leitliniengesetz für die soziale Marktwirtschaft ist ein Gesetz über Leitlinien für die soziale Marktwirtschaft in der DDR zu erarbeiten. Es trägt verfassungsändernde

den Charakter zur verbindlichen Einführung von für die Funktionen der Marktwirtschaft unverzichtbaren Grundnormen (insbesondere Sicherung des Erwerbs von Eigentum auch an Produktionsmitteln und juristische Gleichbehandlung aller Eigentümer, Prinzip freier Preisbildung, allgemeine Vertragsfreiheit, Wettbewerb und Chancengleichheit für alle Unternehmen, Gewerbefreiheit und Recht auf freie Niederlassung, Aufhebung des Außenhandelsmonopols und freier Außenhandel für alle Unternehmen, Tarifautonomie).

Entgegenstehende Artikel der Verfassung der DDR werden mit diesem Gesetz aufgehoben. Ausgehend von diesem Gesetz sind Generalklauseln und weitere Änderungen in wichtigen Gesetzen (u. a. Zivilgesetzbuch, Arbeitsgesetzbuch), die der Entwicklung der Marktwirtschaft und der Rechtssicherheit entgegenstehen, vorzusehen.

5.1.2.2.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 Gesetz über Niederlassungen von Unternehmen in der DDR

Schaffung von Regelungen zur Niederlassung von Tochtergesellschaften und Zweigniederlassungen einschließlich für Banken und Versicherungen unter gleichzeitiger Einbeziehung und Überarbeitung der in der DDR geltenden Regelung für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Joint-venture-Vo vom 25. Januar 1990).

Für diese Materie ist in der BRD das BMJ zuständig.

5.1.2.3. Währungs- und bankrechtliche Regelungen

— Gesetz über Befugnisse der Deutschen Bundesbank in der DDR

Übernahme des Gesetzes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für die DDR. Mit Einführung der DM sind die Befugnisse der Deutschen Bundesbank auf das gesamte Währungsgebiet der DM auszudehnen. Das schließt gleichzeitig die Aufhebung bzw. Anpassung des Gesetzes über die Staatsbank ein.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Regelung des Kreditwesens in der DDR durch Übernahme des Gesetzes der BRD über das Kreditwesen mit den erforderlichen Anpassungen. Aufhebung bzw. Anpassung von Rechtsvorschriften auf dem Gebiet der Kreditgewährung, des Zahlungsverkehrs und des Sparsens.

— Devisengesetz

Aufhebung des Devisengesetzes der DDR und Neuregelung des Devisenverkehrs in Anpassung an die Rechtsvorschriften der BRD.

— Währungsumstellungsgesetz/DM-Bilanzgesetz

Gesetz zur Umstellung der Währung von Mark der DDR auf DM sowie Regelung der Umstellung aller Vermögenswerte auf DM einschließlich der Regelung der DM-Eröffnungsbilanz.

Die Währungsunion erfordert unbedingt die Schaffung eines DM-Bilanzgesetzes (für die Bundesrepublik ist dafür das BMJ zuständig). Entsprechende Gesetze existieren aus dem Jahre 1923, 1948 und im Zusammenhang mit der Angliederung des Saarlandes. Eine diesbezügliche Regelung wird innerhalb von drei bis vier Monaten nach Vollzug der Währungsunion für erforderlich gehalten.

— Hypothekendarlehenbankgesetz

Dieses Gesetz müßte die Grundlage bilden für die Ermöglichung des DDR-Geschäfts der BRD-Hypothekendarlehenbanken. Die Übernahme der Regelungen bzw. deren Anpassung müßte mittelfristig geprüft werden. Zu beachten ist, daß in der Bundesrepublik für dieses Gesetz das BMJ zuständig ist. Für die Rechtsvorschriften der öffentlich-rechtlichen Kreditanstalten und das Bausparen ist das BMF zuständig.

5.1.2.4.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Mit der Umstellung der Wirtschaft auf ein marktwirtschaftliches System entsteht ein Bedarf an wettbewerbs- und kartellrechtlichen Regelungen. Es ist deshalb auf der Grundlage der kartellrechtlichen Vorschriften des EG-Rechts (Art. 85 bis 87 EWG-Vertrag) und in Anlehnung an die BRD-Regelung ein

—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und ein

— Gesetz zur Novellierung des Gesetzes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Zuständigkeit BMJ) vorzubereiten.

5.1.2.5. Finanz- und Steuerrecht

— Gesetz über die Finanzverfassung der DDR

Die Finanzverfassung regelt in Abänderung der Verfassung der DDR die Aufteilung der Finanzverantwortung zwischen der Republik und den Ländern, die sich aus der Wahrnehmung der zentralen Republik- und Landesaufgaben ergibt. Auf der Grundlage der Aufgabenverteilung und des Länderfinanzausgleichs bestimmt sie die Selbständigkeit und Unab-

hängigkeit von Republik und Ländern in der eigenverantwortlichen Planung, Ausführung und Kontrolle ihrer Haushalte.

— Gesetz über die Haushaltsordnung der DDR

Mit diesem Gesetz sind — angepaßt an das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der Bundesrepublik sowie an das Gesetz über die Bundeshaushaltsordnung — alle notwendigen gesetzlichen Bestimmungen der Haushaltsordnung zu schaffen.

— Gesetz über den Rechnungshof der DDR

Mit diesem Gesetz wird der Rechnungshof der DDR geschaffen, und es werden seine Aufgaben, insbesondere seine Stellung und Organisation, Zusammensetzung sowie Geschäftsverteilung und Zuständigkeit geregelt.

— Gesetz über die Preisbildung und die Preisüberwachung

Mit diesem Gesetz wird die Regierung ermächtigt, die Preise grundsätzlich freizugeben sowie für bestimmte Bereiche mit großer Bedeutung für eine sozial abgesicherte Lebenshaltung der Bevölkerung, für ökologische Erfordernisse und für andere gesamtwirtschaftliche Zielstellungen von hohem Gewicht staatliche Preisregelungen zu erlassen. Aufhebung geltender Vorschriften, die diesen Grundregeln entgegenstehen.

— Gesetz über die Umsatzsteuer

Dieses Gesetz bildet die Grundlage für die Erhebung einer Netto-Umsatzsteuer (Mehrwertsteuer) in den Unternehmen bei weitgehender Angleichung an das Mehrwertsteuergesetz der BRD.

— Gesetz über die Erhebung von Verbrauchsteuern

Dieses Gesetz regelt die Erhebung spezieller Verbrauchsteuern, wie z. B. Mineralöl-, Branntwein-, Kaffee-, Tee-, Schaumweinsteuer usw.

— Gesetz über die Abgabenordnung

Mit diesem Gesetz werde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Bürger und Unternehmen im Besteuerungsverfahren sowie die dazugehörigen Rechtsmittel geregelt.

— Gesetz zur Anpassung geltender Steuergesetze

Im Zusammenhang mit der Einführung der Mehrwertsteuer, der Erhebung von Verbrauchsteuern und dem Gesetz über die Abgabenordnung sind notwendige Rechtsanpassungen bei geltenden Steuergesetzen, u. a. Einkommen- und Körperschaftsteuergesetz sowie Vermögensteuergesetz, vorzunehmen.

5.1.2.6. Arbeits- und Sozialrecht

— Gesetz zur Änderung des Arbeitsgesetzbuchs

Ausgestaltung des Kündigungsrechts einschließlich des Kündigungsschutzes in Anlehnung an das Recht der BRD. Notwendige Veränder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Inkraftsetzung eines Betriebsverfassungsgesetzes sowie eines Tarifvertragsgesetzes.

— Betriebsverfassungsgesetz

Regelungen über die Bildung, die Wahl sowie die Rechte und Pflichten von Betriebsräten in Unternehmen.

— Gesetz über die Mitbestimmung der Werktätigen in Kapitalgesellschaften

Regelung eines einheitlichen Modells der Mitbestimmung in den Aufsichtsräten unter Anlehnung an das Mitbestimmungsgesetz der BRD vom 4. Mai 1976. Begrenzung des „Montan-Modells“ auf Aufsichtsräte solcher Kapitalgesellschaften.

— Tarifvertragsgesetz

Regelungen für den Abschluß und die Durchführung von Tarifverträgen einschließlich Regelungen für die Beilegung von Streitigkeiten zwischen den Tarifvertragsparteien.

— Änderung der sozial- und rentenrechtlichen Regelungen

— Gesetz über die Sozialversicherung

Regelungen über den Träger der Sozialversicherung, ihre Finanzierung und die Sozialgerichtsbarkeit.

Regelungen u. a. zur Arbeitsvermittlung, zur beruflichen Fortbildung und Umschulung und zum Arbeitslosengeld.

5.2. Schaffung konföderativer Strukturen (Länderbildung)

Ein Schwerpunkt der eingeleiteten Verwaltungsreform ist der Übergang zu föderativen Strukturen und die (Wieder-)Einführung der Länder. Noch in diesem Jahr sind Wahlen zu den Ländern vorgesehen. Die DDR entwickelt sich damit — bereits im Vorfeld der Vereinigung mit der BRD — vom Unitarstaat zu einem föderativen Bundesstaat, dessen Gliedstaaten — in Anlehnung an die durch das Grundgesetz vorgegebene Kompetenzverteilung in der BRD — über die erforderlichen Zuständigkeiten und Befugnisse verfügen müssen. Die Trennung von legislativer, exekutiver und judikativer Gewalt ist auch auf Landesebene zu gewährleisten und mit der ver-

tikalen Gewaltenteilung zwischen Bund und Ländern zu verbinden. Das geht einher mit der Herausbild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in den Städten und Gemeinden.

Die staatsrechtlichen Vorgaben für die Einrichtung eines föderativen Bundesstaates sind durch verfassungsgebendes bzw. -ändernde Rechtsakte zu schaffen.

Die Schaffung der Länder erfordert darüber hinaus eine Vielzahl gesetzgeberischer Maßnahmen zur Schaffung föderativer Organisationsformen in Legislative, Exekutive und Judikative, die kompatibel zu denen der BRD sein müssen, um ihre Zusammenführung in einem gesamtdeutschen Bundesstaat zu ermöglichen.

Änderungen im materiellen Recht stehen in Vorbereitung und Realisierung der Länderbildung weniger im Vordergrund und können deshalb hier außer Betracht bleiben. Die folgenden Ausführungen beschränken sich auf die aus der Sicht der Justiz im Zuge der Länderbildung zu realisierenden Maßnahmen. Die zur Schaffung einer föderativen Strukturen entsprechenden staatlichen Verwaltung notwendigen Veränderungen sind — wenngleich mit der Rechts- und Justizreform eng verknüpft — Bestandteil der Verwaltungsreform.

5.2.1. Verfassungsrecht

Die künftigen Länder haben sich eine eigene Verfassung zu geb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in den Ländern muß — in Anlehnung an Art. 28 GG und als Konsequenz bundesstaatlicher Vorgaben — den Grundsätzen des demokratischen und sozialen Rechtsstaates entsprechen. In die Länderverfassungen sind Aussagen über die künftige Struktur der Rechtspflegeorgane aufzunehmen.

Auf der Grundlage ihrer Verfassung haben die Länder die Möglichkeit, ein (Landes-)Verfassungsgericht einzurichten. Sie sind zuständig für das Normenkontrollverfahren im jeweiligen Land, d. h. für die Prüfung der Frage, ob ein bestimmtes Landesgesetz mit der Landesverfassung übereinstimmt. Es kann ferner über Verfassungsbeschwerden entscheiden, soweit es die Verfassungen der Länder betrifft. Dazu bedarf es entsprechender landesrechtlicher Regelungen.

5.2.2. Gerichtsverfassungsrecht

Im Prozeß des Übergangs zu föderativen Strukturen ist die Rechtspflege neu zu ordnen. Dazu ist als Grundlagengesetz ein neues Gerichtsverfassungsgesetz zu erarbeiten, das inhaltlich Stellung, Aufgaben, Organisation und Zuständigkeiten der (ordentlichen) Gerichte neu bestimmen muß.

Wenn es auch für die Wirtschafts-, Wohnungs- und Sozialunion noch nicht zwingend erforderlich ist, ist das GVG im Rahmen seiner Neufassung zu entideologisieren und von allen Regelungen zu befreien, die der früheren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verhaftet sind.

Das GVG sollte auch weiterhin von einem dreistufigen Gerichtssystem ausgehen. Um die Funktionsfähigkeit der Gerichte nicht unnötig zu belasten, sollten die derzeitigen — ggf. anders zu bezeichnenden — Kreisgerichte als erstinstanzliche Gerichte grundsätzlich erhalten bleiben. Es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ß ihr Einzugsbereich nicht mit der politisch-territorialen Gliederung übereinstimmen muß, da die engen Verknüpfungen mit den Kommunalverwaltungen nicht mehr diese Bedeutung haben.

Zu regeln ist, welche Obergerichte als Gerichte 2. Instanz zu bilden sind (vgl. auch 4.2.2.3.). Im neuen GVG ist davon auszugehen, daß die Gerichte in den Ländern den Landesjustizverwaltungen und das Oberste (Bundes-)Gericht der Justizverwalt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unterstehen.

In die Neufassung des GVG sind die für die Staatsanwaltschaft erforderlichen Regelungen zu integrieren. Die bisherige Konzeption, Stellung und Aufgaben der Staatsanwaltschaften sind den Gerichten der jeweiligen Ebene zuzuordnen und der Dienstaufsicht durch die Justizverwaltung zu unterstellen. Ihre Aufgaben sind auf das Strafverfahren zu beschränken (vgl. 4.2.5.). Mit Erlaß der Neufassung sind neben dem GVG selbst dann auch das StAG und — soweit noch nicht vorher gesehen — die gesetzlichen Bestimmungen über die gesellschaftlichen Gerichte aufzuheben.

5.2.3. Justizverwaltung

Mit der Bildung von Ländern ist eine dem föderativen Staatsaufbau entsprechende Justizverwaltung aufzubauen. In jedem Land wird als Bestandteil der Exekutive ein (Landes-)Justizministerium zu schaffen sein, das die Justizverwaltung für alle Landesjustizorgane ausübt. Die zentrale Anleitung durch das Ministerium der Justiz wird damit beseitigt. Die von ihm bislang gegenüber nachgeordneten Gerichten und anderen Rechtspflegeorganen wahrgenommenen Aufgaben werden auf die Länderjustizministerien zu übertragen sein. Seine Befugnisse im Bereich der Justizverwaltung beschränken sich dann auf die obersten (Bundes-)Justizorgane.

Notwendig verbunden ist damit eine Neufassung des Statuts des MdJ.

Um einheitliche Strukturen und Aufgaben der Justizministerien in allen Ländern zu sichern, ist vom MdJ ein Modell zu erarbeiten, das ihnen unabhängig von eigenen Entscheidungen als Muster dienen soll.

5.2.4. Freiwillige Gerichtsbarkeit

Im Zuge der Länderbildung ist mit der Rückübertragung der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zu beginnen. Da die sofortige Übernahme auf allen Gebieten nicht gleich möglich sein wird, ist ein Stufenplan mit einer exakten Zeitbestimmung zu erarbeiten, wobei die Angelegenheiten, die mit der Auflösung der Staatlichen Notariate im Zusammenhang stehen, Prioritäten haben.

Das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vom 17. Mai 1898 ist weiter anwendbar, da es weder durch die VO über die Übertragung der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vom 15. Februar 1952 noch durch das Gesetz über das Verfahren der Staatlichen Notariate vom 16. November 1956 aufgehoben wurde, sondern nur von den Staatlichen Notariaten nicht mehr anzuwenden war. Es bedarf allerdings des Erlasses von Übergangs- und Anpassungsbestimmungen.

— Die verfahrensrechtlichen Regelungen müssen neu erlassen werden:

Zur Umprofilierung der bisherigen Sekretäre in Rechtspfleger, insbesondere auf dem Gebiet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ist eine

— Regelung über Stellung und Aufgaben der Rechtspfleger zu schaffen.

Soweit bislang von der Jugendhilfe wahrgenommene Angelegenheiten (Vormundschaftssachen) in die gerichtliche Zuständigkeit überführt werden, ergibt sich insoweit auch die Notwendigkeit einer Änderung der

— Jugendhilfe VO.

5.2.5. Notariatsrecht

Die sich aus der Rückübertragung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in die gerichtliche Zuständigkeit ergebenden und die sich im Prozeß der Länderbildung schrittweise vollziehenden Veränderungen der Notariatsorganisation (vgl. 4.2.7.) bedürfen entsprechender gesetzlicher Neuregelungen. Das Gesetz über die Staatlichen Notariate kann dann keinen Bestand mehr haben. Notwendig ist die Schaffung einer

— VO über die Tä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 Notarordnung,

— Gebührenordnung.

5.2.6. Anwaltsrecht

Für die Organisation der Rechtsanwaltschaft ist die Bildung von Rechtsanwaltskammern vorgesehen (vgl. 4.2.8.).

Die Kammerbildung ist nicht an die künftige Länderstruktur zu binden, wird diese aber nicht außer acht lassen können.

Mit der Kammerbildung soll bereits vor Einrichtung der Länder im Zeitraum Mai/Juni begonnen und im Herbst abgeschlossen werden. Vorgesehen ist, in Berlin, Leipzig, Karl-Marx-Stadt und Dresden eigene Kammern zu bilden. Für die jetzigen Bezirke

Halbe/Magdeburg	(Sachsen-Anhalt),
Rostock/Schwerin/Neubrandenburg	(Mecklenburg),
Erfurt/Gera/Suhl	(Thüringen),
Potsdam/Cottbus/Frankfurt (Oder)	(Brandenburg)

soll jeweils eine Kammer geschaffen werden.

Rechtliche Grundlagen dafür sind durch eine

— VO über die Rechtsanwaltskammern und eine

— AO über die Bildung der Rechtsanwaltskammern zu schaffen.

5.2.7. Strafvollzugsrecht

Die zur beabsichtigten Herauslösung des Strafvollzugs aus dem Verantwortungs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Innere Angelegenheiten und zu seiner Eingliederung in die Justizverwaltung (vgl. 4.3.) erforderlichen gesetzgeberischen Maßnahmen sind im Prozeß der Länderbildung vorzubereiten und in seiner Folge zu realisieren. Die Organisation des Strafvollzugs und die Verwaltung der Vollzugsanstalten ist schrittweise in die Kompetenz der Länderjustizministerien zu übertragen. Dazu bedarf es einer Änderung des

— Strafvollzugsgesetzes.

Der Strafvollzug sollte spätestens 1991; wenn die Länderbildung bis dahin erfolgt und die Arbeitsfähigkeit der Länderjustizministerien gewährleistet ist, übernommen werden.

5.3. Vorbereitung der Vereinigung beider Staaten

Außer den unter 5.1 und 5.2. dargestellten Maßnahmen sind in Vorbereitung auf die staatliche Vereinigung beider deutscher Staaten weitergehende rechtsangleichende Maßnahmen erforderlich, die die Herstellung der Rechtseinheit befördern, nicht aber voraussetzen.

Auf allen Rechtsgebieten — sowohl im materiellen als auch im prozessualen Recht — muß im Detail ausgelotet werden,

- welche geltenden Regelungen obsolet geworden sind,
- welche Regelungen der BRD zu übernehmen sind,
- welche Anpassungs- oder Übergangsregelungen und welche Übergangszeiten erforderlich sind,
- welche Regelungen — neben nicht adäquatem BRD-Recht — vorerst weiterbestehen müssen,
- wo gemeinsam Neuregelungen anzustreben sind und
- welche geltenden Regelungen in eine gesamtdeutsche Rechtsordnung einzubringen sind.

Das ist Voraussetzung, um alle erforderlichen Modifikationen zu bestimmen, die ein Aufnahmegesetz zur schrittweisen Herstellung der Rechtseinheit festschreiben muß.

6. Personelle Voraussetzungen für die Neuordnung der Rechtspflege

6.1. Vergangenheitsbewältigung

Die Justiz kann ihre durch Fehlentwicklungen der Vergangenheit beeinträchtigte, für eine rechtsstaatliche Ordnung aber unerläßliche Autorität nur dann wiedererlangen, wenn sie glaubhaft einen Selbstreinigungsprozess vollzieht.

Allerdings ist entschiedenen Forderungen entgegenzutreten, wonach die im Dienst stehend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nicht mehr in ihren Ämtern verbleiben könnten. Solche Auffassungen lassen unberücksichtigt, daß die meisten Mitarbeiter der Justizorgane nach bestem Wissen und Gewissen auf der Grundlage der geltenden Gesetze gehandelt und entschieden haben. Es gibt nicht wenige, die zwar keine Gegner des früheren Systems waren, sich ihm aber auch nicht bedingungslos unterwarfen. Sie standen Deformationen kritisch gegenüber und setzten sich im Rahmen ihrer Möglichkeiten für die strikte Wahrung der Rechte und Würde der Menschen und für ein Höchstmaß an Rechtsstaatlichkeit ein. Von ihren bisherigen Funktionen sind — wie bereits vom Runden Tisch gefordert wurde — vor allem jene zu entbinden, die maßgeblich die damalige politische Strafrechtsprechung angeleitet und ausgeübt haben.

In den zum Verantwortungsbereich des Ministeriums der Justiz gehörenden Gerichten sind die erforderlichen personellen Veränderungen eingeleitet und zum großen Teil auch realisiert worden. Danach sind mit Stand vom 31. März 1990 13 von 15 Direktoren der Bezirksgerichte und 13 Stellvertreter für Strafrecht aus ihrer Funktion aberufen worden. Weitere personelle Veränderungen ergaben sich für 17 Richter der Bezirksgerichte und 23 Direktoren und Richter der Kreisgerichte. Die genannten Personen sind nicht mehr in der Rechtsprechung tätig.

6.2. Richterrechtliche Probleme

Nach den geltenden gerichtsverfassungsrechtlichen Regelungen ist eine Wahl durch die jeweilige Volksvertretung Voraussetzung für die Ausübung des Richteramtes. Die derzeit tätigen Richter sind für die Dauer der Wahlperiode der Volksvertretungen bis zu ihrer Neuwahl gewählt (§§ 46 Abs. 1, 48 Abs. 1 GVG). Die Wahl der Richter müßte innerhalb von drei Monaten (§§ 46 Abs. 4, 48 Abs. 1 GVG) erfolgen. Solange — aber auch nicht länger — sind sie berechtigt, das Richteramt auszuüben. Dieser Zeitraum endet für die Richter des Obersten Gerichts am 18. Juni und für die Richter der Kreisgerichte am 6. August 1990.

Da zur Wahrung der richterlichen Unabhängigkeit eine beständige Wahl der Richter durch die Volksvertretungen nicht mehr vorgesehen ist, droht hier ein Vakuum zu entstehen, das die Rechtsprechung zum Erliegen bringen könnte. Dringend erforderlich ist deshalb ein Richtergesetz, auf dessen Grundlage das richterliche Dienstverhältnis begründet werden kann.

Hinsichtlich der derzeit tätigen Richter wird das Gesetz nicht ohne weiteres davon ausgehen können, daß sie mit seinem Inkrafttreten kraft Gesetzes als Richter auf Lebenszeit gelten. Notwendig ist aber eine Übergangsregelung, daß sie über die Voraussetzungen für das Richteramt auf Lebenszeit verfügen und auf der Grundlage der dazu im Rich-

tergesetz getroffenen Regelungen in das Richterdienstverhältnis berufen werden können.

Ein besonderer Beschluß der Volkskammer über die Verlängerung der Wahlperiode der Richter der Kreis- und Bezirksgerichte — wie vom Runden Tisch angeregt — sollte nur dann erwogen werden, wenn ein Richtergesetz nicht mehr rechtzeitig verabschiedet werden kann. Dabei muß Beachtung finden, daß ein solcher Beschluß zwar die derzeit tätigen Richter weiterhin zur Ausübung der Rechtsprechung legitimieren, nicht aber ermöglichen würde, die aus dem Ausscheiden von Richtern resultierenden Lücken (vgl. 6.1.) und den durch — auch kurzfristige — Übernahme weiterer Rechtsprechungsaufgaben entstehenden Mehrbedarf (z. B. die Übernahme der „Vertragsrichter“) auszufüllen.

6.3. Personeller Mehrbedarf

Die konsequente Verwirklichung der Rechts- und Justizreform und die zur Sicherung der Rechtsstaatlichkeit erforderlichen Maßnahmen werden einen erheblichen Mehrbedarf an Juristen mit sich bringen.

Im Bereich der Justiz ergibt sich dieser Mehrbedarf vor allem aus der Ausdehnung des gerichtlichen Rechtsschutzes auf Handelssachen und auf öffentlich-rechtliche Angelegenheiten (Verwaltungs-, Finanz- und Sozialrecht) und aus der Herausbildung neuer Spruchkörperchaften und Justizbehörden. Diesen Mehrbedarf gilt es, zunächst in erster Linie aus eigener Kraft, also aus den in der DDR vorhandenen Juristen, zu decken. Durch die Gewinnung

- der Mitarbeiter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 eines Teils des Personals der Staatsanwaltschaft,
- eines Teils des Personals der Militärgerichte,
- von Notaren, die im Zuge der Übernahme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in die gerichtliche Zuständigkeit
- sowie von Justitiaren, die in der Wirtschaft frei werden, können personelle Reserven für die Gerichte erschlossen werden.

Zu ihrer Unterstützung ist der Einsatz von Juristen aus der BRD als Berater — vorerst nicht für Ämter — anzustreben, die insbesondere bei der Einrichtung neuer Institutionen tätig werden sollten.

Sollte sich infolge von Rechtsschutzerweiterungen der Arbeitsanfall derart erhöhen, daß ein effizienter Rechtsschutz durch die in den Justizorganen tätigen Juristen nicht mehr gesichert werden kann, wird der ständige Einsatz von Juristen aus der BRD für Justizfunktionen unausbleiblich sein. Dafür sind dann die notwendigen rechtlichen und materiellen Voraussetzungen zu schaffen.

Über bereits eingehende Bewerbungen von Juristen der BRD für eine Tätigkeit als Richter, Notar oder Rechtsanwalt in der DDR sollte der Minister der Justiz bis dahin im Einzelfall entscheiden. Grundsätzlich bestehen gegen einen solchen Einsatz keine Bedenken, sofern die Staatsbürgerschaft der DDR angenommen wird, Kenntnisse über das Recht der DDR nachgewiesen werden oder ein Vorbereitungsdienst geleistet wird.

6.4. Fortbildung der in der Praxis tätigen Juristen

Die Weiterbildung der im Beruf stehenden Juristen ist eine dringliche, aber auch schwierige Aufgabe, weil sehr unterschiedlichen Bedürfnissen Rechnung getragen werden muß und in einem kurzen Zeitraum neue Aufgaben zu übernehmen sind, für die oft nicht die genügende Vorbereitungszeit vorhanden ist.

Die Fortbildung muß zwei Grundaufgaben erfüllen:

- a) die aktuelle, aufgabenbezogene Weiterbildung, die in die Justiz- und Rechtsreform einzupassen ist und sich jeweils an einen bestimmten Personenkreis wendet und
- b) eine mittelfristig angelegte Einführung in die Staats- und Rechtsordnung der BRD und — soweit notwendig — auch in europäisches Recht, die allen Juristen (gleich, welche konkreten Berufsaufgaben sie zu erfüllen haben) angeboten werden sollte.

Im Mittelpunkt der aktuellen Weiterbildung muß die Vorbereitung der Richter, Notare und Justizsekretäre auf neues Recht, neue Zuständigkeiten der Gerichte und Notariate, neue Gerichts- und Justizstrukturen und eine umfangreiche Rechtsangleichung stehen. Soweit die einzelnen Schritte dieser Entwicklung für 1990/91 absehbar sind, ergeben sich auf dem Gebiet der Weiterbildung folgende Aufgaben:

- Vorbereitung der Staatlichen Notariate und Gerichte auf die neuen Zuständigkeiten, die sich aus den Rechtsvorschriften zur Gründung von Privatbetrieben und Unternehmen mit ausländischer Beteiligung ergeben (Beurkundung der Gesellschaftsverträge und Satzungen, gerichtliche Streitentscheidung, Registerführung);

- Vorbereitung der Arbeitsrichter auf neue Rechtsvorschriften zum Arbeitsrecht;
- Fortbildung der zuständigen Richter und Justizsekretäre auf verwaltungsrechtlichen und weiteren öffentlich-rechtlichen Gebieten;
- Vorbereitung der Richter, Notare und Justizsekretäre auf die schrittweise Wiedereinführung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 Schulung der Strafrichter zum 6.StAG und zu weiteren Strafrechtsneuerungen.

Ein großer Teil dieser Weiterbildungsaufgaben wird über Lehrgänge in Wustrau mit anschließenden bezirklichen Schulungsmaßnahmen und Selbststudium gelöst werden. Diese Maßnahmen haben bereits begonnen. Die Juristen aus der BRD und Westberlin werden dabei Unterstützung geben. Inzwischen liegen auch Weiterbildungsangebote der Universitäten in Berlin, Leipzig, Halle, Jena und Rostock vor, die im Territorium vor allem für die Qualifizierung zum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mit genutzt werden können.

Neben diesen spezifischen, aufgabenbezogenen und meistens kurzfristig zu lösenden Fortbildungsmaßnahmen muß jedem Juristen eine umfassendere und systematischere Einführung und Einarbeitung in die Staats- und Rechtsordnung der BRD, die in ihren wesentlichen Teilen einmal die Staats- und Rechtsordnung eines gesamtdeutschen Bundesstaates sein wird, ermöglicht werden. Diese Aufgabe wird nur mit umfangreicher Unterstützung durch das BMJ und die Landesjustizministerien der BRD zu lösen sein, die vor allem die gesamte inhaltliche Ausgestaltung übernehmen sollten. Erste Vorbereitungen für dieses Projekt haben im April 1990 begonnen.

6.5. Harmonisierung der Ausbildung

Die Angleichung der Studiengänge und Examen sollte auf der Grundlage der Beratungsergebnisse der Loccumer Tagung vom März 1990 erfolgen. Sie würden es ermöglichen, die vierjährige Universitätsausbildung in der DDR und das Universitätsexamen auch weiterhin beizubehalten.

In zwei wesentlichen Fragen wird aber Kompromißbereitschaft unumgänglich sein. Es wird wahrscheinlich akzeptiert werden müssen, daß das Universitätsexamen nicht mehr den Zugang zu einem juristischen Beruf eröffnet und damit ein weiterer Ausbildungsgang mit Staatsprüfung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eine volljuristische Ausbildung wird.

Der mit dem Richtergesetz der DDR angestrebte Vorbereitungsdienst für die Rechtspflegeberufe berücksichtigt bereits künftige Notwendigkeiten. Er beginnt am 1. September 1990 mit den Absolventen der Humboldt-Universität Berlin und der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Er wird in den nächsten Jahren auch den Absolventen der anderen Sektionen Rechtswissenschaft offenstehen.

Die Angleichung des Vorbereitungsdienstes an den BRD sollte hinsichtlich des Ausbildungs niveaus, der Zeitdauer und des Examens erfolgen. Dazu würde die Bildung von Prüfungsämtern in den Ländern oder eines Justizprüfsamtes beim Ministerium der Justiz erforderlich werden. Ein zentrales Justizprüfungsamt würde in den ersten Jahren genügen.

Um ein möglichst einheitliches Niveau in der Universitätsausbildung in der DDR und der BRD zu erreichen, sollten die Studienpläne angeglichen und eine eng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Fakultäten angestrebt werden.

Die Vorschläge von Loccum für die Übergangsregelungen bis zur Vereinheitlichung von Ausbildung und Prüfungen in einem gesamtdeutschen Staat verdienen gleichfalls Beachtung. Insbesondere der erreichte Konsens zur Examensanerkennung sollte realisiert werden: „Die bis zur Vereinheitlichung erbrachten Studienleistungen einschließlich der Abschluszeugnisse sollten gegenseitig anerkannt werden. Zur Aufnahme eines Juristenberufes im jeweils anderen Teil Deutschlands sollte, solange die inhaltliche Gleichheit von Ausbildung und Prüfungen noch nicht erreicht ist, eine Zusatzausbildung und -prüfung seitens der dafür zuständigen Länder vorausgesetzt werden.“

6.6. Künftige Fortbildungskonzeption

Die Weiterbildung sollte sich von einer vornehmlich zentral und bezirklich, also administrativ geleiteten und durchgeführten Einrichtung zur persönlichen Angelegenheit jedes einzelnen entwickeln. Es muß sich der Grundsatz durchsetzen, daß jeder Jurist für seinen Bildungsstand und seine berufliche Qualifikation selbst verantwortlich ist und dafür selbst Sorge zu tragen hat (einschließlich der Finanzierung und der ständigen Ausstattung mit neuer Fachliteratur).

Die notwendige Unterstützung der individuellen Fortbildung muß in erster Linie von den Berufsverbänden und ihren Fortbildungseinrichtungen gegeben werden. Eine Hauptaufgabe des Richterbundes der DDR und weiterer gesellschaftlicher Berufsgremien sollte vor allem die Fortbildung sein.

Fortbildung durch die Justizverwaltung wird sich künftig auf prinzipielle Fragen beschränken müssen. Sie wird in die Zuständigkeit der Justizministerien der Länder eingehen. Allerdings ist die Vorbereitung des gesamten Personalbestands auf die sich aus der Rechtsangleichung ergebenden Bildungsanforderungen eine so umfangreiche Aufgabe, daß sie weder dem einzelnen Juristen allein überlassen noch von den sich erst bildenden Länderjustizministerien gelöst werden kann. Sie sollte daher für eine Übergangszeit noch vom Ministerium der Justiz geleistet werden.

7. Materielle Voraussetzungen

Die mit der Rechts- und Justizreform angestrebte Schaffung eines funktionsfähigen Rechtspflegesystems ist ohne die Gewährleistung der finanziellen, materiellen und technischen Voraussetzungen nicht möglich. Zur Sicherung insbesondere einer unabhängigen Rechtsprechung sind vom Staat angemessene Mittel zur Verfügung zu stellen, um den Richtern das ordnungsgemäße Ausüben ihres Amtes zu ermöglichen. Das betrifft ebenso die Tätigkeit des mittleren juristischen als auch des juristisch-technischen Bereichs und die Einstufung der entsprechenden Mitarbeiter als Beamte nach dem noch zu erarbeitenden Beamtentrecht der DDR.

Es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ß sich der zusätzliche und höhergradige Bedarf nicht in kürzester Zeit abdecken läßt, sondern daß auch hier schrittweise vorzugehen ist. Von nicht geringer Bedeutung ist die mit der Erweiterung der Zuständigkeit der Gerichte verbundene Notwendigkeit, die gebäudemäßige Unterbringung zu sichern.

1990 konnten bereits Veränderungen herbeigeführt werden, so daß bisher für die im Widerspruch zur Gerichtskultur untergebrachten Dienststellen zu einem großen Teil (in den Bezirken Rostock, Schwerin, Potsdam, Frankfurt/Oder, Cottbus und Gera) bessere räumliche Voraussetzungen geschaffen werden konnten. Noch einer Klärung bedürfen die Gebäudefragen in Berlin (Stadtbezirksgericht Hellerdorf), in den Städten Magdeburg, Leipzig und Karl-Marx-Stadt. Zur Lösung dieser Probleme werden in diesen Territorien Anstrengungen unternommen. Ergebnisse sind aber noch sichtbar.

Hinsichtlich der Erweiterung der Gerichtsbarkeiten ist anzustreben, daß damit verbundene Maßnahmen zur Erhöhung des Personalbestands sowie die räumliche Absicherung Bestandteil eines Ministerrats- bzw. Parlamentsbeschlusses werden. Damit wäre gewährleistet, daß die für diesen Zweck benötigten Mittel haushaltsmäßig sichergestellt und praxiswirksam eingesetzt werden könnten.

8 Organisation der Maßnahmen zur Rechtsangleichung und zur Rechts- und Justizreform

1. Zur Bewältigung der Aufgaben der Rechtsangleichung sollte eine deutsch-deutsche Rechtskommission gebildet werden, der auf beiden Seiten Vertreter der Justizministerien und ggf. weiterer einbeziehender Organe angehören. Sie sollte auf Leiterebene gebildet werden und über die grundlegenden Fragen und Rahmenbedingungen der Rechtsangleichung befinden. Die Arbeit auf den einzelnen Rechtsgebieten sollte auf Expertenebene durch Unterarbeitsgruppen geleistet werden, die der Rechtskommission zurarbeiten. Als Unterarbeitsgruppen kommen in Betracht:

- Rechtspflegerecht (Grundlagen),
- öffentliches Recht (Staats- und Verwaltungsrecht),
- Zivilrecht,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 Strafrecht,
- Strafprozeßrecht,
- Zivilprozeßrecht,
- Arbeits- und Sozialrecht,
- Familienrecht,
- Finanz- und Steuerrecht,
- Patent- und Markenrecht.

Die Tätigkeit der Unterarbeitsgruppen bedarf der Koordinierung. Diese sollte auf Seiten der DDR durch einen entsprechenden Bereich im MdJ gesichert werden.

2.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forderlichen Maßnahmen für

- die Eingliederung des Staatlichen Vertragsgerichts in die ordentliche Gerichtsbarkeit,

XVI

Neu-Justiz 6/90

- die Übernahme des Strafvollzugs,
- die Eingliederung der Staatsanwaltschaft,
- die vom MdJ vorzulegen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sind unter Einbeziehung der jeweils berührten Organe Arbeitsgruppen zu bilden.

3. Zur Vorbereitung der Bildung der Länderjustizorgane sind aus dem Bestand der Rechtspflegeorgane der Bezirke in den zukünftigen Ländern Arbeitstäbe zu bilden. Zur Abstimmung und zur Vorbereitung der Übertragung derzeit noch zentral wahrgenommener Aufgaben auf die Länderjustizministerien sollte je ein Vertreter des MdJ in die Arbeit dieser Gremien einbezogen werden.

Das vorstehende Material enthält eine Standortbestimm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zur Durchführung einer auf die

Rechtsangleichung beider deutscher Staaten gerichteten Rechts- und Justizreform. Es entstand bereits im Vorfeld der Arbeiten zum Entwurf des Staatsvertrags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und diente nicht als dessen Grundlage. Das Ministerium der Justiz war in die Verhandlungsdelegation der DDR nicht unmittelbar einbezogen.

Insoweit besteht zwar weitgehend Übereinstimmung, nicht aber vollständige Deckungsgleichheit zwischen den hier entwickelten Vorstellungen und den Festlegungen des Staatsvertrags. So finden sich insbesondere in den Anlagen II und III des Staatsvertrags zur Rechtsangleichung Bestimmungen, die z.T. über die im Abschnitt 5 enthaltenen Positionen hinausgehen.

Nummer 13

Stand des Übergangs zum „Normalaufbau“ der Gerichtsbarkeit

I. Ordentliche Gerichtsbarkeit

(Errichtung von Amts-, Land- und Oberlandesgerichten)

1.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OLG Rostock; LG Neubrandenburg, Rostock, Schwerin, Stralsund; 31 Amts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2
OLG Naumburg; LG Dessau, Halle, Magdeburg, Stendal; 36 Amtsgerichte.
3. Sachsen seit 1. Januar 1993
OLG Dresden; LG Bautzen, Chemnitz, Dresden, Görlitz, Leipzig, Zwickau; 40 Amtsgerichte.
4. Thüringen zum 1. September 1993
(voraussichtlich: OLG Jena; LG Erfurt, Gera, Mühlhausen, Meiningen)
5. Brandenburg zum 1. Dezember 1993
(voraussichtlich: OLG Brandenburg; LG Cottbus, Frankfurt/Oder, Neuruppin, Potsdam; 25 Amtsgerichte)

II. Verwaltungsgerichtsbarkeit

1. Sachsen-Anhalt seit 1. Februar 1992
OVG Magdeburg; VG Dessau, Halle, Magdeburg.
2.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OVG Greifswald; VG Greifswald, Schwerin.
3. Sachsen seit 1. Juli 1992
OVG Bautzen; VG Chemnitz, Dresden, Leipzig.
4. Thüringen seit 12. Dezember 1992
OVG Weimar; VG Gera, Meiningen, Weimar.
5. Brandenburg seit 1. Januar 1993
OVG Frankfurt/Oder; VG Cottbus, Frankfurt/Oder, Potsdam.

III. Finanzgerichtsbarkeit

1.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FG Greifswald)
2. Sachsen seit 1. Juli 1992 (FG Leipzig)
3.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2
(FG Dessau)
4. Brandenburg seit 1. Januar 1993 (FG Cottbus)
5. Thüringen für Mitte 1993 geplant

IV. Arbeitsgerichtsbarkeit

1. Brandenburg seit 1. Juli 1991
(LAG Potsdam; 7 Arbeits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September 1991
(LAG Halle; 6 Arbeitsgerichte)
3.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LAG Rostock; 4 Arbeitsgerichte)
4. Sachsen seit 1. Juli 1992
(LAG Chemnitz; 5 Arbeitsgerichte)
5. Thüringen seit 9. Januar 1993
(LAG Erfurt; 7 Arbeitsgerichte)

V. Sozialgerichtsbarkeit

1. Brandenburg seit 7. März 1992
(LSG Potsdam; 4 Sozialgerichte)
2. Sachsen-Anhalt seit 1. April 1992
(LSG Halle; 4 Sozialgerichte)
3. Mecklenburg-Vorpommern seit 1. Juli 1992
(LSG Neubrandenburg; 4 Sozialgerichte)
4. Sachsen seit 1. Juli 1992
(LSG Chemnitz; 3 Sozialgerichte)
5. Thüringen für Mitte 1993 geplant

Nummer 14**Rechtsquellen zum Rechtspflegerecht der neuen Länder****I. Bundesrechtliche Vorschriften**

1. Allgemein geltende rechtspflegerechtliche Regelungen
 - a) uneingeschränkt, soweit nicht in den Anlagen zum Einigungsvertrag erwähnt
 - b) nach Maßgabe der Regelungen in Anl. I Kap. III Sachgeb. A Abschn. III des Einigungsvertrages
 - c) ohne Vergleichsordnung, Konkursordnung, Bundesrechtsanwaltsordnung und Bundesnotarordnung.
 2. Sondervorschriften der Anlage I Kap. III Sachgeb. A Abschn. III (in geringerem Umfang auch an anderen Stellen) des Einigungsvertrages, soweit nicht zwischenzeitlich außer Kraft gesetzt oder modifiziert.
 3.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Rechtspflege-Anpassungsgesetz) vom 26. Juni 1992 (BGBl. I S. 1147).
 4. Gesetz zur Prüfung von Rechtsanwaltszulassungen, Notarbestellungen und Berufungen ehrenamtlicher Richter vom 24. Juli 1992 (BGBl. I S. 1386).
 5. Strafrechtliches Rehabilitierungsgesetz vom 29. Oktober 1992 (BGBl. I S. 1814).
 6. Gesetz über das Ruhen der Verjährung bei SED-Unrechtstaten vom 26. März 1993 (BGBl. I S. 392).
 7. Als (partiell) Bundesrecht aufrechterhaltenes Recht der DDR (teilweise in später geänderten Fassungen), insbesondere
 - a) Rechtsanwaltsgesetz vom 13. September 1990
 - b) Verordnung über die Tätigkeit von Notaren in eigener Praxis vom 20. Juni 1990 (mit Gesetzesrang)
 - c) Gesamtvollstreckungsordnung vom 6. Juni 1990
 - d) Ordnung zur Wahl und Berufung der ehrenamtlichen Richter vom 1. September 1990.
- b) Anordnung über die Bestellung von Dolmetschern und Übersetzern für die Gerichte und staatlichen Notariate vom 5. Februar 1976
 - c) Ordnung über die Bildung und Arbeitsweise der Richterwahlausschüsse vom 22. Juli 1990.

2. Brandenburg:

- a) Gesetz zur Errichtung der Arbeitsgerichtsbarkeit im Lande Brandenburg vom 21. Juni 1991 (GVBl. I S. 186)
- b) Gesetz zur Errichtung der Sozialgerichtsbarkeit im Lande Brandenburg vom 3. März 1992 (GVBl. I S. 86)
- c) Gesetz über die Neugliederung der Kreisgerichtsbezirke im Lande Brandenburg (Brandenburgisches Kreisgerichtsbezirksgesetz) vom 8. Dezember 1992 (GVBl. I S. 486), geändert durch Artikel 2 des Kreis- und Gerichtsneugliederungsgesetzes vom 24. Dezember 1992 (GVBl. I S. 546)
- d)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Finanzgerichtsbarkeit und zur Ausführung der Finanzgerichtsordnung im Lande Brandenburg (Brandenburgisches Finanzgerichtsgesetz) vom 10. Dezember 1992 (GVBl. I S. 504)
- e)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und zur Ausführung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im Land Brandenburg (Brandenburgisches Verwaltungsgerichtsgesetz) vom 10. Dezember 1992 (GVBl. I S. 502), geändert durch Artikel 3 des Kreis- und Gerichtsneugliederungsgesetzes vom 24. Dezember 1992 (GVBl. I S. 546)
- f) Richtergesetz des Landes Brandenburg (Brandenburgisches Richtergesetz) vom 24. Februar 1993 (GVBl. I S. 2)

3. Mecklenburg-Vorpommern:

- a) Gerichtsstrukturgesetz vom 19. März 1991 (GVBl. S. 103)
- b) Landesrichtergesetz vom 7. Juni 1991 (GVBl. S. 159)
- c) Gerichtsorganisationsgesetz vom 10. Juni 1992 (GVBl. S. 314)

4. Sachsen:

- a) Richtergesetz des Freistaates Sachsen vom 29. Januar 1991 (GVBl. I S. 21)
- b) Gesetz über die Organisation der Gerichte im Freistaat Sachsen (Sächsisches Gerichtsorganisationsgesetz) vom 30. Juni 1992 (GVBl. S. 287)

II. Die wichtigsten landesrechtlichen Vorschriften

1. Als Landesrecht weitergeltendes Recht der DDR, insbesondere
 - a) Gesetz über die Schiedsstellen in den Gemeinden vom 13. September 1990 (teilweise Bundesrecht)

5. Sachsen-Anhalt:

- a) Gesetz zur Ausführung des Arbeitsgerichtsgesetzes für das Land Sachsen-Anhalt vom 23. August 1991 (GVBl. S. 281)
- b) Gesetz zur Ausführung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und zur Anpassung richterrechtlicher Vorschriften vom 28. Januar 1992 (GVBl. S. 36)
- c) Gesetz zur Ausführung des Sozialgerichtsgesetzes für das Land Sachsen-Anhalt vom 19. März 1992 (GVBl. S. 292)
- d) Gesetz zur Ausführung der Finanzgerichtsordnung für das Land Sachsen-Anhalt vom 24. August 1992 (GVBl. S. 654)
- e) Ausführungs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zum Gerichtsverfassungsgesetz vom 24. August 1992 (GVBl. S. 648)

f) Gesetz über die Organisation der ordentlichen Gerichte im Lande Sachsen-Anhalt vom 24. August 1992 (GVBl. S. 652)

g) Richter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vom 1. April 1993 (GVBl. S. 170)

6. Thüringen:

a)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om 30. Juni 1992 (GVBl. S. 304)

b) Neubekanntmachung des Thüringer Gesetzes zur Ausführung der Verwaltungsgerichtsordnung vom 15. Dezember 1992 (GVBl. S. 576)

c)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Arbeitsgerichtsgesetzes vom 22. Dezember 1992 (GVBl. 1993 S. 1)

Nummer 15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er Ministerpräsident

Anordnung

Auf der Grundlage des § 6 Abs. 2 des Gesetzes vom 25. September 1990 zum teilweisen Straferlaß (GBl. I Nr. 65 S. 1987) wird folgendes angeordnet:

§ 1

(1) Zur Überprüfung von Urteilen der Strafgericht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ie vor dem 1. Juli 1990 ergangen sind, werden für den Bereich der künftigen Länder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bei den jeweiligen Landessprechern unabhängige Ausschüsse eingerichtet.

(2) Die Landessprecher berufen die Mitglieder der Ausschüsse bis zum 10. Oktober 1990. Weitere Ausschüsse können nachträglich berufen werden, soweit eine zeitnahe Prüfung der Urteile dies erfordert.

§ 2

(1) Die Ausschüsse bestehen aus je einem

1. Richter, Staatsanwalt oder Beamten mit Befähigung zum Richteramt, der eine längere Berufserfahrung besitzt,

2. Rechtsanwalt, der bisher nicht im öffentlichen Diens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tätig war,

3. Geistlichen, der in einer Vollzugsanstalt ist oder war.

(2) Die in Absatz 1 Nummer 1 genannten Mitglieder werden den Landessprechern vor Ablauf des in § 1 Abs. 2 genannten Datums aus den Ländern Baden-Württemberg, Bayern, Bremen, Hessen, Hamburg,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und Schleswig-Holstein benannt; zulässig ist auch die Benennung eines Richters oder Beamten, der sich bereits im Ruhestand befindet.

§ 3

(1) Die Überprüfung erfolgt auf Antrag eines Strafgefangenen durch einen Ausschuß desjenigen in § 1 Abs. 1 genannten Landes, in dem die Strafe vollzogen wird.

(2) In dem schriftlichen Antrag soll angegeben werden, welche Einwände gegen das Urteil erhoben werden. Hierfür wird den Strafgefangenen von der Leitung der Vollzugsanstalt ein Formblatt zur Verfügung gestellt. Der Antrag ist bis spätestens 31. Dezember 1990 der Leitung der Vollzugsanstalt vorzulegen, die ihn unverzüglich, unter Beifügung einer Abschrift des Urteils, falls ihr dieses vorliegt, dem zuständigen Ausschuß zuleitet.

(3) Der Ausschuß ist berechtigt, Akten beizuziehen und Auskünfte einzuholen, wenn dies zur Überprüfung des Urteils erforderlich erscheint. Alle Behörden

haben ihm hierbei jede erforderliche Unterstützung zu gewähren und alle erbetenen Unterlagen zugänglich zu machen. Der Strafgefangene soll gehört werden.

§ 4

(1) Der Ausschuß spricht Empfehlungen zur Fortdauer der Vollstreckung und weiteren Sachbehandlung aus, wenn er mehrheitlich zu der Auffassung gelangt, daß wenigstens eine der folgenden Maßnahmen in Betracht zu ziehen ist:

1. Kassationsverfahren;
2. strafrechtliches Rehabilitationsverfahren;
3. Wiederaufnahmeverfahren;
4. Gnadenverfahren;
5. Strafaussetzung nach Teilverbüßung;
6. Vollstreckungsunterbrechung aus besonderen Gründen.

Berlin, den 2. Oktober 1990

de Maizière

(2) Der Ausschuß richtet seine Empfehlungen unter Mitteilung ihrer wesentlichen Gründe an die Stelle, die für die Durchführung der empfohlenen Maßnahmen zuständig ist; erfordern diese einen Antrag, so ist die Empfehlung an die antragsberechtigte Stelle zu richten. Der Ausschuß unterrichtet außerdem den Strafgefangenen über die Empfehlungen unter Hinweis darauf, daß dieser selbst für die Durchführung der Maßnahmen erforderliche Anträge zu stellen hat. Außerdem ist die Leitung der Vollzugsanstalt zu unterrichten. Sieht der Ausschuß von einer Empfehlung ab, so unterrichtet er hiervon den Strafgefangenen und die Leitung der Vollzugsanstalt; der Strafgefangene ist darauf hinzuweisen, daß hiervon nicht seine Rechte berührt werden, selbst Maßnahmen zu beantragen.

§ 5

Nach Abschluß ihrer Arbeiten unterrichten die Ausschüsse die Justizminister über die Überprüfungen und ihre Ergebnisse.

Datum des Eingangs bei dem Leiter der Vollzugsanstalt

Datum des Eingangs beim Ausschuß

Formblatt

Antrag an den Prüfungsausschuß

Name des Strafgefangenen:

Vorname:

Geburtsdatum:

Vollzugsanstalt:

Urteil(e):

Gericht(e):

Datum (Daten):

Aktenzeichen:

Straftat(en):

Strafhöhe:

zu verbüßende Reststrafe:

Einwände gegen das Urteil:

Bitte ankreuzen:

1. zu hohe Strafe
2. unrichtige Zusatzstrafe
3. politisch bedingte Verurteilung oder Strafschärfung
4. Sonstiges

Zusätzliche Bemerkungen:

Der Ausschuß ist befugt, Akten beizuziehen, Auskünfte einzuholen und Empfehlungen für die weitere Sachbehandlung auszusprechen.

Ich bitte darum, vom Ausschuß angeforderte Akten diesem auch dann unverzüglich zuzuleiten, wenn bereits eine gerichtliche Überprüfung (z. B. Kassation) oder ein Gnadenverfahren eingeleitet ist.

.....
Ort, Datum

.....
Unterschrift

Nummer 16

Unabhängige Ausschüsse

	Sachsen-Anhalt	Mecklenburg-Vorpommern	Thüringen	Brandenburg	Sachsen
Gesamtzahl der angehörten Gefangenen bzw. der gestellten Anträge	136	215 46 zwischenz. Entlassung 106 keine Empfehlung 4 an andere LJVen 8 unzulässig, da Urteile nach dem 1. Juli 1990 ergangen	90 8 Gefangene entlassen 1 Gefangener Flucht 56 Anträge zurückgenommen 3 keine Empfehlung, da als angemessen erachtet worden ist 2 Einzelmaßnahmen nicht angezeigt	866 davon 282 Brandenburg betreffend 84 bereits entlassen 84 Rücknahme Antrag 34 keine Empfehlung, da als angemessen erachtet worden ist	375
In wie vielen Fällen wurden durch die Ausschüsse Empfehlungen ausgesprochen?	—	51	20	80	199
Welche Empfehlungen wurden ausgesprochen und wie oft geschah dies im einzelnen?		17 Gnadenempf. 14 Kassationsverfahren 11 Empfehlungen an Staatsanw. wegen vorz. Entlassung (§§ 57, 57a StPO) 1 Kassations- und Gnadenverfahren (Strafe mit rechtsstaatl. Maßstäben nicht vereinbar) 5 Kassat. und/oder Gnadenverf. 1 nach Halbstrafenverbüßung Aussetzung der Reststrafe 2 Verzicht auf Empf. wegen bevorstehender Entlassung	6 Gnadenerweise 8 Kassationsverfahren 3 Aussetzung Rest Jugendstrafe § 88 JGG 2 Vollzug der angeordneten Maßregel vor einer weiteren Strafvollstreckung durchzuführen 1 strafrechtl. Verantwortlichkeit zu prüfen und zu erwägen, ob Kassationsverfahren	58 Gefangenen wurde ein Gnadengesuch empf. 20 Empfehlungen zur gerichtl. Feststellung der Unzulässigkeit der Vollstreckung/ Maßgabe 14 d) bei Jugendlichen 1 Therapieempfehlung Aufhebung gerichtlicher Kontrollmaßnahmen	3 Empfehlungen zur Rehabilitation 6 Anträge auf Wiederaufnahme des Verfahrens 41 Kassationsanträge 26 Gefangenen wurde empfohlen, ein Gnadengesuch zu stellen 112 Empfehlungen, die Möglichkeit einer vorzeitigen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nach §§ 57, 57a StGB zu nutzen.

	Sachsen-Anhalt	Mecklenburg-Vorpommern	Thüringen	Brandenburg	Sachsen
In wie vielen Fällen ist es aufgrund von Überprüfungen zu justitiellen Entscheidungen bzw. Gnadenentscheidungen gekommen, insbesondere solchen, die zur Verkürzung oder Unterbrechung der Haft geführt haben.		<p>— Von den <u>17</u> Gnadenempfehlungen:</p> <p>10 Gnadenerweise</p> <p>3 abgelehnt</p> <p>— Von den <u>14</u> Empfehlungen zu Kassationsverfahren:</p> <p>2 Fälle Gnadenerweise erteilt</p> <p>7 Fälle Strafurteile aufgehoben</p> <p>1 Empfehlung zuständigkeitshalber an andere LJV abgegeben</p> <p>— Von den <u>11</u> Empfehlungen zur Strafaussetzung gem. §§ 57, 57a StGB:</p> <p>8 Fälle gerichtl. Strafaussetzung erfolgt</p> <p>2 Fälle Entscheidung nach § 454 b Abs. 2 StPO</p> <p>1 Fall zuständigkeitshalber an LJV Brandenburg abgegeben.</p>	keine Angaben	<p>— Von den <u>58</u> Gnadenempfehlungen:</p> <p>16 Fälle Entlassung</p> <p>16 Fälle Strafe herabgesetzt</p> <p>6 Fälle Gnadenerweise abgelehnt, Gefährlichkeitsfrage ungeklärt</p> <p>2 Fälle abgelehnt, da Ausschuß von falschem Sachverhalt ausging</p> <p>5 Fälle abgelehnt, da bereits durch Drittelamnestie erledigt</p> <p>1 Fall Entscheidung Ministerpräsident, da „lebenslang“</p> <p>6 offene Fälle, 5 Verfahren Gefährlichkeitsgutachten ausstehend, 1 Fall Kassationsverfahren anhängig</p> <p>1 Fall Abstimmung mit Sachsen, da von dort verhängte Strafe</p> <p>— Von den <u>20</u> Fällen gerichtl. Feststellungsverfahren:</p> <p>2 Fälle Strafe bereits verbüßt</p> <p>18 Fälle über die zuständige Staatsanwaltschaft Einleitung Feststellungsverfahren veranlaßt. In 4 Fällen ist veranlaßt, die sofortige Entlassung zu erwirken, da bereits 10 Jahre verbüßt</p>	

	Sachsen-Anhalt	Mecklenburg-Vorpommern	Thüringen	Brandenburg	Sachsen
Welche anderen Ergebnisse haben die Überprüfungen gebracht?	<p>Die Anhörungen haben zu einer Beruhigung der Gefangenen geführt, weil bei den Anhörungen ihnen eine rechtl. Würdigung ihrer Straftaten nach jetzt geltendem Recht zuteil wurde und auch vermittelt wurde, welche Möglichkeiten einer selbst zu veranlassenden Überprüfung ihres Urteils es gibt und wie die Entlassungsmöglichkeiten sind.</p> <p>In den anschließenden Überprüfungsverfahren (Kassation, Gnade) sind im wesentlichen zur Tatzeit jugendliche und heranwachsende Verurteilte dann erfolgreich gewesen, wenn sie zu Freiheitsstrafen von mehr als 10 Jahren verurteilt waren.</p>	Keine weiteren Erkenntnisse.	Die Ausschüsse haben nicht festgestellt, daß eine auf der Grundlage der überprüften Urteile andauernde Strafvollstreckung im Zeitpunkt der Überprüfung mit rechtsstaatlichen Maßstäben unvereinbar gewesen wäre.	<p>6 gerichtliche Entscheidungen liegen vor: 5 Fälle Strafe herabgesetzt, davon 2 Fälle Reststrafe zur Bewährung 1 Fall Herabsetzung abgelehnt, da Strafe angemessen erscheint</p> <p>Soweit sich bei einem arithmetischen Vergleich Unstimmigkeiten ergeben können, liegt dies daran, daß zum Teil Vorgänge nicht vollständig ausgewertet werden konnten und sich die Zahl der Fälle mit der Zahl der Verfahren nicht deckt. Ein Verfahren konnte nämlich auch mehrere Urteile gegen einen Angeklagten zum Gegenstand haben, bei denen zum Teil Empfehlungen, zum Teil keine Empfehlungen gegeben worden waren.</p>	<p>keine konkreten Angaben</p> <p>Neben den formellen Empfehlungen führte die Arbeit der Ausschüsse zu zahlreichen weiteren Erkenntnissen. Sie reichen von Zweifeln an der Haftfähigkeit bei einzelnen Gefangenen bis hin zu Hinweisen für die Entlassungsvorsorge sowie die Notwendigkeit psychiatrischer Behandlung. Außerdem wurden Verlegungsgesuche u. ä. aufgenommen und an die zuständigen Stellen weitergeleitet.</p> <p>Insgesamt führten 168 Anhörungen zu einem Ergebnis, das entweder in der Form eines konkreten Antrages oder als sonstiger Hinweis an die zuständigen Stellen weiterzuleiten war.</p>

Nummer 17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tand: 25. Oktober 1990
wff. 342

Merkblatt

zu den Möglichkeiten, die Aufhebung rechtskräftiger Strafurteile der DDR oder die Beseitigung ihrer Wirkungen zu erreichen, insbesondere durch Kassation und Rehabilitierung (Artikel 17 und 18 sowie Anlage I Kapitel I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Buchstabe 14 d, e) und h) des Einigungsvertrages vom 31. August 1990 sowie Artikel 3 Nr. 6 und Artikel 4 Nr. 1 und 2 der Vereinbarung vom 18. September 1990 i. V. m. Artikel 1 des Gesetzes vom 23. September 1990 [BGBl. 1990 II S. 885, 933f., 1240f., 1243]).

Der Vertrag zu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bestimmt zwar, daß Strafurteile von Gerichten der DDR grundsätzlich wirksam bleiben. Da aber beide vertragschließenden Staaten davon ausgegangen sind, daß in der Vergangenheit die Strafjustiz der DDR nicht selten zu Unrecht verurteilt hat, legt das Vertragswerk zugleich fest, daß die Strafurteile der DDR nach dem von der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3. Oktober 1990) an geltenden Recht auf ihre Vereinbarkeit mit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überprüft werden können und daß Verfahren zur Rehabilitierung von Personen stattfinden können, die wegen einer Handlung strafrechtlich verfolgt wurden, mit der sie verfassungsmäßige politische Grundrechte wahrgenommen haben.

I. Im einzelnen bestehen für die Betroffenen folgende Möglichkeiten:

1. Kassation

Im Verfahren der Kassation (Aufhebung) können — nur zugunsten eines Verurteilten — rechtskräftige Strafscheidungen der Gerichte der DDR überprüft werden, und zwar unabhängig davon, wie lange die Verurteilung zurückliegt und ob die verhängten Strafen und sonstigen Rechtsfolgen bereits vollstreckt worden sind, zur Zeit noch vollstreckt werden oder ob keine Vollstreckung stattgefunden hat.

a) Die Kassation ist möglich, wenn

- die Entscheidung auf einer schwerwiegenden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t,
- die Entscheidung im Strafausspruch oder im Ausspruch über die sonstigen Rechtsfolgen der Tat gröblich unrichtig oder nicht mit rechtsstaatlichen Maßstäben vereinbar ist.

Das Kassationsverfahren kann im Falle der Aufhebung der früheren Verurteilung entweder zugleich zum Freispruch oder zu einer Herabsetzung der Strafe oder, je nach Lage des Einzelfalles, dazu führen, daß über die frühere Anklage in einer erneuten Hauptverhandlung vor einem Strafge-

richt, an welches das Kassationsgericht die Sache verweist, verhandelt werden muß.

- b) Das Kassationsverfahren findet nur auf Antrag statt, der bis zum Ablauf des 18. September 1992 gestellt werden kann. Neben der Staatsanwaltschaft hat nach dem Einigungsvertrag nunmehr auch der Verurteilte ein eigenes Antragsrecht; ist dieser verstorben, so sind sein Ehegatte, seine Verwandten auf- und absteigender Linie und seine Geschwister zu dem Antrag befugt.
- c) Der Antrag ist schriftlich an das Bezirksgericht zu richten und in tatsächlicher und rechtlicher Hinsicht zu begründen. Die Unterschrift eines Rechtsanwalts ist nicht erforderlich, die Einholung rechtskundigen Rates aber zu empfehlen. Örtlich zuständig ist das Bezirksgericht, in dessen Bezirk die Strafsache früher anhängig war. Ist das Bezirksgericht früher selber mit der Strafsache in erster Instanz oder in einer Rechtsmittelinstanz befaßt gewesen, so ist ein anderes Bezirksgericht desselben Bundeslandes zuständig, welches Bezirksgericht dies ist, wird durch den besonderen Senat des Bezirksgerichts, in dessen Bezirk die jeweilige Landesregierung ihren Sitz hat, allgemein bestimmt. In Berlin ist das Landgericht Berlin zuständig.

2. Rehabilitierung

Das von der DDR erlassene Rehabilitierungsgesetz vom 6. September 1990 (GBl. I S. 1459) bleibt hinsichtlich der sogenannten strafrechtlichen Rehabilitierung in Kraft. Das Gesetz findet ferner Anwendung bei Ansprüchen von Personen, die durch eine rechtsstaatswidrige Einweisung in eine psychiatrische Anstalt Opfer des SED-Unrechtsregimes geworden sind.

Die übrigen Regelungen des Rehabilitierungsgesetzes, insbesondere zur sog. verwaltungsrechtlichen und beruflichen Rehabilitierung, gelten nicht fort. Es bleibt dem künftigen gesamtdeutschen Gesetzgeber vorbehalten zu entscheiden, ob und welche Regelungen er insoweit erläßt.

Das Rehabilitierungsgesetz bezweckt eine politisch-moralische Genugtuung für Personen, die „wegen einer Handlung strafrechtlich verurteilt wurden, mit der sie verfassungsmäßige politische Grundrechte wahrgenommen haben“. Von dem Gesetz erfaßt werden Verurteilungen oder Strafverfolgungsmaßnahmen (und rechtsstaatswidrige Einweisungen in psychiatrische Anstalten), die von Gerichten der DDR oder deutschen Gerichten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in der Zeit vom 8. Mai 1945 bis zum 1. Juli 1990 erlassen oder veranlaßt wurden.

Eine Rehabilitation ist insbesondere für Personen vorgesehen, die verurteilt wurden, weil sie

- politischen Widerspruch in Wort und Schrift, durch friedliche Demonstrationen oder Zusammenkünfte erhoben haben,
- gewaltlosen Widerstand geleistet haben,
- mit friedlichen Mitteln Einfluß auf die Genehmigung einer Ausreise aus der DDR genommen haben oder
- Kontakt zu Dienststellen, Organisationen und Personen außerhalb des Gebietes der DDR aufgenommen haben, ohne im Sinne des Sechsten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GBL I der DDR Nr. 39 vom 9. Juli 1990, S. 526 ff.) Spionage- oder Agententätigkeit auszuüben.

Rehabilitiert werden auch Personen, die die DDR entgegen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verlassen haben oder verlassen wollten, wenn sie deshalb verurteilt wurden.

Eine Rehabilitation ist ausgeschlossen, wenn die in Betracht zu ziehende Handlung auch nach dem Inkrafttreten des Sechsten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strafbar ist.

Der Antrag auf Rehabilitation kann innerhalb von zwei Jahren nach Inkrafttreten des Rehabilitierungsgesetzes (also bis zum Ablauf des 18. September 1992) bei dem zuständigen Bezirksgericht oder bei jedem anderen Gericht im Gebiet der ehemaligen DDR gestellt werden.

3. Verhältnis zwischen Kassationsverfahren und Rehabilitierungsverfahren

Die beiden Antragsmöglichkeiten bestehen nebeneinander und ergänzen sich. Welcher Antrag allein oder in erster Linie in Betracht kommt, ist nach den Umständen des Einzelfalles zu beurteilen. Durch die gesetzliche Regelung ist dafür gesorgt, daß im Einzelfall die Sache in das passende Verfahren überführt wird. Ist nämlich das mit einem Kassationsantrag befaßte Gericht der Auffassung, es komme keine Kassation, wohl aber eine Rehabilitation in Betracht, so verweist es von sich aus die Sache an den zuständigen Rehabilitierungssenat. Umgekehrt wird verfahren, wenn das mit einem Antrag auf Rehabilitation befaßte Gericht der Auffassung ist, nicht Rehabilitation, sondern Kassation komme in Betracht.

4. Wiederaufnahme

Die Aufhebung von Strafurteilen der DDR zugunsten des Verurteilten kann auch im Wege der Wiederaufnahme nach den §§ 359 ff. der Strafprozeßordnung betrieben werden. Eine Wiederaufnahme kommt namentlich in Betracht, wenn die tatsächlichen Feststellungen des Strafgerichts auf einer fehlerhaften Grundlage beruht haben und neue Tatsachen oder Beweismittel beigebracht werden können. Der Antrag

des Verurteilten oder, wenn er verstorben ist, eines Hinterbliebenen auf Wiederaufnahme muß entweder mittels einer von dem früheren Verteidiger oder von einem anderen Rechtsanwalt unterzeichneten Schrift gestellt oder bei der Geschäftsstelle des Gerichts mündlich zu Protokoll erklärt werden.

5. Antrag auf Feststellung der Unzulässigkeit der Vollstreckung

Für den Fall, daß ein Kassationsverfahren nicht durchgeführt worden ist und auch nicht mehr durchgeführt werden kann, kann der durch ein Strafgericht der DDR Verurteilte, wenn aus dem Urteil noch eine Rechtsfolge zu vollstrecken ist, die Vollstreckung mit dem Antrag auf Feststellung abwenden, daß die Verurteilung mit rechtsstaatlichen Maßstäben nicht vereinbar ist oder daß Art und Höhe der Rechtsfolge nach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nicht angemessen sind oder dem Zweck eines Bundesgesetzes widersprechen. Es kann auch festgestellt werden, daß die Rechtsfolge in einer mildereren Folgenart zu vollstrecken ist. Der Antrag ist an das Gericht zu stellen, das für eine Kassation zuständig wäre (vgl. oben zu 1.).

6.

Hat ein durch ein Strafgericht der DDR Verurteilter in der Vergangenheit erreicht, daß ein Justizorga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 15 des Gesetzes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 und Amtshilfe in Strafsachen festgestellt hat, daß die Vollstreckung der von dem Gericht der DDR verhängten Strafe unzulässig ist, so ist auf Grund dieser Feststellung vom 3. Oktober 1990 an die Vollstreckung auch im Gebiet der bisherigen DDR ohne weiteres unzulässig.

7. Überprüfung von Strafurteilen der DDR, aus denen derzeit in der bisherigen DDR Freiheitsstrafen vollstreckt werden.

In einer Verwaltungsanordnung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s der DDR vom 2. Oktober 1990 ist vorgesehen, daß auf Antrag eines jeden Strafgefangenen das zugrundeliegende, bis zum 1. Juli 1990 in der DDR ergangene Strafurteil durch einen unabhängigen Ausschuß überprüft wird. Die Strafgefangenen erhalten die für eine Antragstellung erforderlichen Hinweise in den Haftanstalten.

Der unabhängige Ausschuß spricht Empfehlungen zur weiteren Sachbehandlung aus, wenn er der Meinung ist, es komme wenigstens eine der folgenden Maßnahmen in Betracht: Kassationsverfahren, Rehabilitierungsverfahren, Wiederaufnahme, Gnadenverfahren, Strafaussetzung nach Teilverbüßung, Vollstreckungsunterbrechung. Der Ausschuß unterrichtet in jedem Falle den Strafgefangenen über das Ergebnis der Überprüfung. Die Rechte des Strafgefangenen,

selbst Maßnahmen zu beantragen, werden durch die Tätigkeit des Ausschusses und durch deren Ergebnis nicht beeinträchtigt.

II. Ansprüche

1. Nach dem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Für die Rückgabe von Vermögenswerten bzw. Entschädigung, die im Zusammenhang mit der im Wege der Kassation oder der Rehabilitierung erfolgten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strafrechtlicher Entscheidungen steht, gilt das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das mit dem Einigungsvertrag in Kraft getreten ist.

Danach werden Vermögenseinziehungen, die enteignenden Charakter haben, grundsätzlich rückgängig gemacht. Eingezogene Vermögenswerte werden den Betroffenen bzw. ihren Erben nach erfolgter Kassation bzw. Rehabilitierung auf Antrag zurückgegeben oder — wenn keine Rückgabe gewünscht wird — entschädigt.

Eine Rückübertragung ist ausgeschlossen, wenn sie von der Natur der Sache her nicht mehr möglich ist. Die Rückübertragung von Eigentumsrechten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ist auch dann ausgeschlossen, wenn die betreffenden Immobilien

- mit erheblichem baulichen Aufwand in ihrer Nutzungsart oder Zweckbestimmung verändert wurden und ein öffentliches Interesse an dieser Nutzung besteht, oder
- dem Gemeingebrauch gewidmet wurden, oder
- im komplexen Wohnungs- oder Siedlungsbau verwendet wurden, oder
- der gewerblichen Nutzung zugeführt oder in eine Unternehmenseinheit einbezogen wurden und nicht ohne erhebliche Beeinträchtigung des Unternehmens zurückgegeben werden können.

Soweit Unternehmen bzw. Unternehmensbeteiligungen der Einziehung unterlagen, ist eine Rückgabe ausgeschlossen, wenn das Unternehmen in seiner heutigen Form mit dem Unternehmen im Zeitpunkt der Vermögenseinziehung nicht mehr vergleichbar ist.

Die Rückübertragung eingezogener Vermögenswerte ist grundsätzlich auch dann ausgeschlossen, wenn an ihnen natürliche Personen, Religionsgemeinschaften oder gemeinnützige Stiftungen in redlicher Weise Eigentum oder dingliche Nutzungsrechte erworben haben.

In allen Fällen, in denen eine Rückübereignung wegen Unmöglichkeit oder redlichen Erwerbs nicht in Betracht kommt, steht dem Betroffenen bzw. seinen Erben ein Anspruch auf Entschädigung zu, und zwar in den Fällen des redlichen Erwerbs wahlweise auch in Form eines Ersatzgrundstücks.

Im übrigen wird Entschädigung statt Rückgabe gewährt, wenn der Betroffene bzw. seine Erben dies wünschen.

Die Höhe der Entschädigung wird durch ein gesondertes Gesetz geregelt.

Miet- oder sonstige Nutzungsrechte werden durch die Rückübereignung nicht berührt. Der Berechtigte tritt in die durch diese Verträge begründeten Rechte und Pflichten ein. Ausgenommen sind solche Fälle, in denen der Mieter oder Nutzer bei Abschluß des Vertrages nicht redlich gewesen ist.

Über die nach dem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vorgesehenen Ansprüche wird im Verwaltungsverfahren entschieden. Zuständig sind die noch zu errichtenden Ämter bzw. Landes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bis zu ihrer Einrichtung die Landratsämter der Kreise bzw. die Stadtverwaltungen der kreisfreien Städte.

Das Verfahren wird nur auf Antrag durchgeführt. Personen (bzw. deren Erben), deren Vermögen im Zusammenhang mit rechtsstaatswidrigen Strafverfahren eingezogen wurde, haben insoweit die Möglichkeit, ihre Ansprüche auf Rückübereignung bzw. Entschädigung bis zum 31. März 1991 beim zuständigen Landratsamt oder der Stadtverwaltung anzumelden. Voraussetzung dafür ist, daß vorher ein Antrag auf Kassation oder Rehabilitierung gestellt worden ist.

Über die Einzelheiten der Anmeldung informiert das beigefügte Merkblatt des Bundesministers der Justiz.

2. Nach dem Rehabilitierungsgesetz

Nach dem Rehabilitierungsgesetz besteht ein Anspruch auf soziale Ausgleichsleistungen. Die Bestimmungen des Häftlingshilfegesetzes finden entsprechende Anwendung. Bereits erbrachte Leistungen nach dem Häftlingshilfegesetz oder sonstige Ausgleichsleistungen werden hierbei angerechnet.

Die Anrechnung von Haftzeiten bei der Festsetzung von Renten erfolgt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9 Rehabilitierungsgesetz.

Die Frage einer Rückerstattung bezahlter Geldstrafen, Gebühren, Auslagen oder Haftkosten regelt das Gesetz nicht. Sie bleibt einer besonderen gesetzlichen Regelung vorbehalten.

3. Nach Kassation

Voraussetzungen, Art und Höhe einer Entschädigung für die Folgen einer durch Kassation aufgehobenen gerichtlichen Entscheidung richten sich nach den Vorschriften der Strafprozeßordnung der DDR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Untersuchungshaft und Strafen mit Freiheitsentzug (§§ 369 ff.). Die Leistung übersteigt jedoch nicht den für den Fall einer strafrechtlichen Rehabilitierung vorgesehenen Umfang.

4. Nach dem Häftlingshilfegesetz

Mit dem 3. Oktober 1990 tritt auch das Häftlingshilfegesetz in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in Kraft.

Das Gesetz betrifft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und nach freiheitlich-demokratischer Auffassung nicht zu vertretenden Gründen in Gewahrsam genommen worden sind und gewährt diesen Personen und ihren Hinterbliebenen bestimmte Leistungen. Eine förmliche Aufhebung des zugrundeliegenden Strafurteils ist für Ansprüche nach dem HHG nicht erforderlich.

Anträge über die Entscheidung, ob eine Zugehörigkeit zum Personenkreis des § 1 Häftlingshilfegesetz zu bejahen ist, sind bis zum 31. Dezember 1992 zu stellen.

Zuständig für Antragsteller aus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ist die Stiftung für ehemalige politische Häftlinge in 1000 Berlin 48, Marienfelder Allee 66—80. Für Antragsteller aus dem Land Berlin verbleibt es bei der Zuständigkeit des Landesamtes für zentrale soziale Aufgaben.

Die Häftlingshilfe umfaßt Geldleistungen als sogenannte Eingliederungshilfen, Leistungen nach dem Bundesversorgungsgesetz, Berücksichtigung von Gewahrsamszeiten als Ersatzzeiten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sowie sonstige Unterstützungen, wenn ein Berechtigter durch die Folgen des Gewahrsams in seiner wirtschaftlichen Lage besonders beeinträchtigt ist.

Nummer 18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 4123 (DDR) — R2 1191/90 —

Bonn, den 6. November 1990
FS.734

An die
Justiz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änder

nachrichtlich:

An die
übrigen Landesjustizverwaltungen

**Betr.: Unabhängige Ausschüsse zur Überprüfung der Strafurteile der
DDR-Gerichte**

**hier: Ergebnis der Besprechung der neuen Bundesländer in Erfurt am
30. Oktober 1990**

I.

Als Ergebnis der o. Besprechung vom 30. Oktober zum oben genannten Thema ist festzuhalten:

Die Länder einigten sich nach längerer Diskussion auf folgendes Vorgehen:

1. Zur Überprüfung der Urteile von inhaftierten Verurteilten und zu deren Beratung über die dagegen möglichen Rechtsbehelfe werden unabhängige Ausschüsse eingerichtet, die mindestens aus einem Juristen aus den Altländern und einem Anstaltsgeistlichen bestehen.
2. Die Ausschüsse erläutern auf Wunsch des Verurteilten nach Einsicht in das Urteil dem Gefangenen die Möglichkeit der Urteilsüberprüfung und beraten ihn bei der Stellung eines Antrags insbesondere
 - auf Rehabilitation
 - auf Kassation
 - auf Unterbrechung der Strafvollstreckung oder
 - auf Stellung eines Gnadengesuches.

3. Der Ausschuß soll in der jeweiligen Strafvollzugsanstalt tätig werden.

4. Die Überprüfung soll unverzüglich durchgeführt werden.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erklärte aus fachlicher Sicht, dieses Konzept mitzutragen.

Dieses Konzept tritt an die Stelle desjenigen, das in der Anordnung des Ministerpräsidenten der DDR vom 2. Oktober 1990 vorgesehen war. Maßgebend für die Änderung des Konzepts war, die Arbeitsweise des Ausschusses so elastisch und einfach wie möglich zu gestalten und eine möglichst rasche Durchführung der Überprüfungsaktion zu gewährleisten, ferner, rechtliche Bedenken auszuräumen.

II.

Nach meiner Auffassung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ß die personellen Vorschläge der 10 westlichen Bundesländer für die Berufung der Ausschußvorsitzenden durch die Änderung des verwaltungsorganisatorischen Rahmens der Ausschüsse unberührt geblieben sind, also weiterhin Geltung haben.

III.

Ich halte mein Angebot an die neuen Bundesländer aufrecht, ihnen, soweit dies auch bei Berücksichtigung der vereinfachten Struktur der Ausschüsse noch erforderlich erscheint, jede mir mögliche technische und auch personelle Unterstützung zu gewähren, und wäre dankbar, wenn Sie mir diesbezügliche Wünsche umgehend mitteilen.

Im Hinblick darauf, daß innerhalb der Bundesregierung der Wunsch besteht, über den Fortgang der Überprüfung der Urteile ständig auf dem laufenden gehalten zu werden, darf ich die Bitte an Sie richten, mir den jeweiligen Zeitpunkt der Arbeitsaufnahme des bzw. der Ausschüsse in Ihrem Land mitzuteilen. Im übrigen erhoffe ich von der Besprechung der neuen Bundesländer zu diversen Justizthemen, die am 29. November in Berlin stattfinden soll, auch Aufschluß über den weiteren Verlauf der Aktivität der Ausschüsse.

Im Auftrag

Dr. Hilger

Nummer 19**Vergleichszahlen zum Geschäftsanfall**

Gebiet und Zeitraum		auf 1 000 000 Einwohner entfallen jährlich (circa-Werte)			
		Zivilsachen	Familiensachen	Arbeitsachen	Strafsachen
Bundesrepublik (1989)		22 000	6 200	6 000	13 000
DDR ¹⁾		3 100	5 000	780	3 200
Neue Länder	Okt.-Dez. 1990	2 370	1 650	11 900	950
Neue Länder	1. Halbjahr 1991	3 590	2 170	21 000	2 790
Neue Länder	2. Halbjahr 1991	5 960	3 300	18 200	4 840
Neue Länder	1. Halbjahr 1992	8 000	3 700	11 900	8 460
Neue Länder	2. Halbjahr 1992 ²⁾	11 900	3 850	10 400	8 800

¹⁾ Jahresdurchschnitt 1980 bis 1989

²⁾ Hochrechnung der Monatsergebnisse Juli bis November

Nummer 20

HA-e11270

Tabellen zur Geschäftsbelas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teilweise Berlin)

Die nachfolgenden Tabellen weisen den Geschäftsanfall in Zivil-, Familien-, Straf- und Arbeitsrechtssachen bei den Kreis- und Bezirksgerichten der DDR für die Zeit vom 1. Januar 1980 bis zum September 1990 und daran anschließend den Geschäftsanfall der ordentlichen Gerichte und der Fachgerichte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aus. Die Angaben beruhen, soweit es die Zeit vor dem 3. Oktober 1990 betrifft, auf einer behördeninternen Statistik des Ministeriums der Justiz der DDR und für die nachfolgende Zeit auf einer vereinfachten Geschäftsübersichtstatistik, di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führt wird. Die Zahlen sind als vorläufig zu betrachten.

Die Tabellen weisen für die I. Instanz die Geschäftszahlen der Kreisgerichte und der Bezirksgerichte zusammengefaßt aus. Angaben über die II. Instanz betreffen jeweils nur die Bezirksgerichte, Geschäftszahlen des Obersten Gerichts liegen nicht vor. Die Geschäftszahlen der Kreis- und Bezirksgerichte wurden auch für die Zeit vor dem 3. Oktober 1990 dem jeweiligen neuen Bundesland zugeordnet.

Die nachfolgenden Hinweise sollen mit Blick auf die Gerichtsorganisation und das Prozeßrecht der DDR die Interpretation der statistischen Angaben erleichtern.

Der Gerichtsaufbau in der ehemaligen DDR war dreistufig: Kreisgericht, Bezirksgericht, Oberstes Gericht.

Das Kreisgericht war als allgemeines Eingangsgericht zuständig für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über Rechtsverletzungen, Rechtsstreitigkeiten und andere Rechtsangelegenheiten auf den Gebieten des Zivil- (ohne freiwillige Gerichtsbarkeit), Familien-, Arbeits- und Strafrechts, soweit nicht die Zuständigkeit anderer Gerichte gegeben war (§ 23 GVG/DDR). Erst mit Auflösung der Staatlichen Vertragsgerichte am 1. Juli 1990 wurde der Rechtsweg zu den ordentlichen Gerichten für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in Handelssachen eröffnet (GBl. I Nr. 32 S. 284).

Die statistischen Daten der Zivilrechtsprechung sind daher nur bedingt vergleichbar mit Daten der Altbundesländer.

Bei den Kreisgerichten bestanden Kammern für Zivil-, Familien-, Arbeitsrechts- und Strafsachen. Die Kammern waren mit einem Berufsrichter und zwei Laienrichtern (Schöffen) besetzt. Nach Auflösung der Staatlichen Vertragsgerichte entstanden bei den Kreisgerichten der Bezirksstädte Kammern für Handelssachen.

Den Gerichtsbezirk des Kreisgerichts bestimmten die Grenzen des jeweiligen Kreises, in einigen Fällen hatten Stadt- und Landkreise ein gemeinsames Kreisgericht.

Das Bezirksgericht war als Gericht erster Instanz zuständig für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bestimmter Strafsachen (§ 30 Abs. 1 GVG/DDR), in weiteren Fällen bei Anklageerhebung durch den Staatsanwalt des Bezirkes oder wenn der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die Sache vor Eröffnung durch das Kreisgericht an das Bezirksgericht herangezogen hatte (§ 30 Abs. 1 GVG/DDR). Als Gericht erster Instanz war das Bezirksgericht in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sachen dann zuständig, wenn der Staatsanwalt des Bezirkes die Verhandlung vor dem Bezirksgericht beantragt oder der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die Sache herangezogen hatte (§ 30 Abs. 2 GVG/DDR).

Das Bezirksgericht war als Gericht zweiter Instanz für di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über Berufungen und Proteste gegen Urteile des Kreisgerichts und über Beschwerden gegen Beschlüsse des Kreisgerichts zuständig (§ 30 Abs. 3 GVG/DDR).

Bei den Bezirksgerichten bestanden Senate für Zivil-, Familien-, Arbeitsrechts- und Strafsachen. Sie waren als Senate in erster Instanz mit einem Berufsrichter und zwei Laienrichtern (Schöffen) und in zweiter Instanz mit drei Berufsrichtern, der Senat für Arbeitsrechtssachen jedoch auch in zweiter Instanz mit einem Berufsrichter und zwei Schöffen besetzt.

Den Gerichtsbezirk des Bezirksgerichts bestimmten die Bezirksgrenzen. In jedem Bezirk gab es ein Bezirksgericht. Gegen in erster Instanz ergangene Urteile war die Berufung zulässig, zu deren Einlegung in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sachen die Prozeßbeteiligten und in Strafsachen der Verurteilte, bei jugendlichen Verurteilten auch deren Eltern oder sonstige Erziehungsberechtigte und sein Verteidiger berechtigt waren. Das Rechtsmittel der Berufung war nicht beschränkt. Der Staatsanwalt konnte unter gleichen Voraussetzungen gegen erstinstanzliche Urteile Protest einlegen (§§ 147 Abs. 1, 149 ZPO/DDR, §§ 283, 287 StPO/DDR), ausgenommen gegen Entscheidungen über die Scheidung einer Ehe (§ 146 Abs. 2 ZPO/DDR). Die Vorschriften über die Einlegung des Protestes in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sachen wurden mit dem 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r Zivilprozeßordnung (GBl. I Nr. 40 S. 543) mit Wirkung vom 1. Juli 1990 ersatzlos gestrichen. Die Beschwerde war gegen Beschlüsse des erstinstanzlichen Gerichts zulässig, soweit das Gesetz sie nicht ausdrücklich einer Anfechtung entzog (§ 305 Abs. 1 StPO/DDR, § 158 Abs. 1 ZPO/DDR). Sie war eine „sofortige“ Beschwerde in dem Sinne, daß sie in Strafsachen innerhalb einer Frist von einer Woche, in den übrigen Verfahren innerhalb von zwei Wochen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bei dem Gericht einzulegen war, von dem der angefochtene Beschluß erlassen wurde. Dieses Gericht konnte, wenn es die Beschwerde für begründet hielt, ihr stattgeben und seine Entscheidung abändern. Andernfalls war die Beschwerde dem Rechtsmittelgericht (Bezirksgericht) vorzulegen. Die nachfolgenden Tabellen über Beschwerdeverfahren weisen die Beschwerdeverfahren

aus, in denen das Kreisgericht einer Beschwerde nicht stattgab und das Bezirksgericht eine Entscheidung traf.

Beschwerdeverfahren in Strafsachen richteten sich insbesondere gegen den Erlaß eines Haftbefehls, die richterliche Bestätigung einer Beschlagnahme oder einer Durchsuchung, gegen den Erlaß eines Arrestbefehls und gegen gerichtliche Entscheidungen über die Verwirklichung der Maßnahm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z. B. die Anordnung des Vollzugs einer auf Bewährung angedrohten Freiheitsstrafe, die Umwandlung einer Geldstrafe in eine Freiheitsstrafe, den Widerruf einer Strafaussetzung auf Bewährung).

Beschwerden in Zivil-, Familien- und Arbeitsrechtssachen konnten sich gegen gerichtliche Beschlüsse richten, in denen insbesondere eine offensichtlich unbegründete Klage abgewiesen oder eine Klageänderung als unzulässig erklärt wurde, eine Klage als unzulässig abzuweisen war, weil Gründe vorlagen, die eine Verhandlung und Entscheidung zur Sache ausschlossen. Sie konnte sich auch gegen Beschlüsse über Fristversäumnis oder Vorauszahlungspflicht, gegen den Erlaß einer einstweiligen Anordnung oder gegen eine Kostenentscheidung richten, sofern nicht gegen das Urteil wegen der Hauptsache Berufung eingelegt wurde.

Die Kassation (§§ 311 ff. StPO/DDR) war ein prozessual besonders ausgestalteter Rechtsbehelf gegen rechtskräftige gerichtliche Entscheidungen. Diese Bestimmungen blieben nach dem Einigungsvertrag mit der Maßgabe anwendbar, daß die Kassation nur zugunsten eines Verurteilten und nunmehr auch auf dessen Antrag zulässig war und durchgeführt werden konnte, wenn

1. die Entscheidung auf einer schwerwiegenden Verletzung des Gesetzes beruhte,
2. die Entscheidung im Strafausspruch oder im Ausspruch über die sonstigen Rechtsfolgen der Tat gröblich unrichtig oder nicht mit rechtsstaatlichen Maßstäben vereinbar ist (Anlage I Kapitel III Sachgebiet A Ziffer 14).

Nach Inkrafttreten des Erstes SED-Unrechtsbereinigungsgesetzes vom 29. Oktober 1992 (BGBl. I Nr. 50 S. 1814) werden die am 30. Oktober 1992 noch anhängigen Kassationsverfahren als Rehabilitierungsverfahren fortgeführt.

Die Rechtsprechung in Strafsachen gegen Militärangehörige und gegen Personen, denen Straftaten gegen die militärische Sicherheit zur Last gelegt wurden, oblag Militärgerichten, Militärobergerichten und dem Militärstrafsenat beim Obersten Gericht. Diese Gerichte wurden am 15. Juli 1990 aufgelöst (Verfassungsgesetz zur Änderung und Ergänzung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vom 5. Juli 1990, GBl. I Nr. 42 S. 634). Geschäftszahlen dieser Gerichte liegen nicht vor.

h 01

Zivilsachen

Verfahren I. Instanz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9 583	—	—	—
Mecklenburg-Vorpommern	6 483	6 982	10 452	23 267
Brandenburg	11 010	9 670	14 467	31 186
Sachsen-Anhalt	11 577	10 173	16 230	33 213
Sachsen	15 972	15 534	22 002	45 773
Thüringen	6 530	6 621	13 700	28 916
ohne Berlin-Ost	51 572	48 980	76 851	162 455
mit Berlin-Ost	61 155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9 432	—	—	—
Mecklenburg-Vorpommern	6 211	5 713	7 398	18 494
Brandenburg	10 841	8 689	10 409	22 315
Sachsen-Anhalt	11 257	9 162	11 168	22 149
Sachsen	15 498	13 535	15 684	38 608
Thüringen	6 339	5 497	8 879	21 296
ohne Berlin-Ost	50 146	42 596	53 538	122 862
mit Berlin-Ost	59 578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1 805	—	—	—
Mecklenburg-Vorpommern	1 232	2 781	5 660	11 862
Brandenburg	3 068	4 446	8 541	17 401
Sachsen-Anhalt	2 109	3 512	8 499	17 324
Sachsen	3 206	5 817	12 145	19 307
Thüringen	1 314	3 125	8 084	15 704
ohne Berlin-Ost	10 929	19 681	42 929	81 598
mit Berlin-Ost	12 734	—	—	—

Zivil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rufungen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609	—	—	—
Mecklenburg-Vorpommern	484	381	416	919
Brandenburg	1 003	716	964	1 689
Sachsen-Anhalt	703	552	573	1 245
Sachsen	1 312	929	804	1 897
Thüringen	525	403	450	1 054
ohne Berlin-Ost	4 027	2 981	3 207	6 804
mit Berlin-Ost	4 636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557	—	—	—
Mecklenburg-Vorpommern	436	390	325	857
Brandenburg	993	682	632	1 500
Sachsen-Anhalt	654	584	466	1 325
Sachsen	1 290	938	759	1 618
Thüringen	470	434	390	702
ohne Berlin-Ost	3 843	3 028	2 572	6 002
mit Berlin-Ost	4 400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123	—	—	—
Mecklenburg-Vorpommern	95	108	199	362
Brandenburg	160	200	532	695
Sachsen-Anhalt	117	99	196	364
Sachsen	225	259	304	582
Thüringen	150	153	220	561
ohne Berlin-Ost	747	819	1 451	2 564
mit Berlin-Ost	870	—	—	—

h 03

Zivil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schwerden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394	—	—	—
Mecklenburg-Vorpommern	332	378	402	1 172
Brandenburg	796	800	649	1 548
Sachsen-Anhalt	565	649	418	1 311
Sachsen	914	904	685	2 021
Thüringen	450	443	376	986
ohne Berlin-Ost	3 057	3 174	2 530	7 038
mit Berlin-Ost	3 451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366	—	—	—
Mecklenburg-Vorpommern	326	359	317	1 194
Brandenburg	776	807	445	1 411
Sachsen-Anhalt	533	662	396	1 128
Sachsen	917	856	608	1 948
Thüringen	446	445	313	853
ohne Berlin-Ost	2 998	3 129	2 079	6 534
mit Berlin-Ost	3 364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54	—	—	—
Mecklenburg-Vorpommern	29	48	133	244
Brandenburg	88	81	285	481
Sachsen-Anhalt	69	56	71	260
Sachsen	73	121	198	289
Thüringen	29	27	101	245
ohne Berlin-Ost	288	333	788	1 519
mit Berlin-Ost	342	—	—	—

Familiensachen

Verfahren I. Instanz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9 311	—	—	—
Mecklenburg-Vorpommern	11 499	9 355	6 153	7 806
Brandenburg	15 137	11 803	8 509	11 865
Sachsen-Anhalt	16 672	12 510	8 887	12 479
Sachsen	23 618	18 273	10 648	15 168
Thüringen	12 289	9 299	6 786	9 797
ohne Berlin-Ost	79 215	61 240	40 983	57 115
mit Berlin-Ost	88 526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8 901	—	—	—
Mecklenburg-Vorpommern	11 187	8 323	4 778	5 802
Brandenburg	14 947	10 976	6 987	8 779
Sachsen-Anhalt	16 303	12 444	6 603	9 873
Sachsen	23 259	17 499	9 585	9 870
Thüringen	11 849	8 708	5 797	7 171
ohne Berlin-Ost	77 545	57 950	33 750	41 495
mit Berlin-Ost	86 446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1 914	—	—	—
Mecklenburg-Vorpommern	1 783	2 815	3 983	5 922
Brandenburg	3 316	4 143	5 652	8 640
Sachsen-Anhalt	2 957	3 023	5 192	6 788
Sachsen	4 571	5 345	6 407	11 575
Thüringen	2 188	2 779	4 006	6 632
ohne Berlin-Ost	14 815	18 105	25 240	39 557
mit Berlin-Ost	16 729	—	—	—

h 05

Familien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rufungen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358	—	—	—
Mecklenburg-Vorpommern	403	268	78	142
Brandenburg	600	478	108	160
Sachsen-Anhalt	494	334	119	145
Sachsen	1 002	702	228	364
Thüringen	420	298	91	146
ohne Berlin-Ost	2 919	2 080	624	957
mit Berlin-Ost	3 277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349	—	—	—
Mecklenburg-Vorpommern	363	290	109	132
Brandenburg	609	458	188	157
Sachsen-Anhalt	477	327	160	156
Sachsen	997	726	305	426
Thüringen	412	295	121	145
ohne Berlin-Ost	2 858	2 096	883	1 016
mit Berlin-Ost	3 207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31	—	—	—
Mecklenburg-Vorpommern	83	61	30	27
Brandenburg	108	128	48	51
Sachsen-Anhalt	66	73	34	23
Sachsen	206	182	105	43
Thüringen	82	85	56	57
ohne Berlin-Ost	545	529	273	201
mit Berlin-Ost	576	—	—	—

Familien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schwerden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288	—	—	—
Mecklenburg-Vorpommern	280	212	102	151
Brandenburg	500	397	180	371
Sachsen-Anhalt	545	309	211	315
Sachsen	550	363	140	230
Thüringen	331	212	125	193
ohne Berlin-Ost	2 206	1 493	758	1 260
mit Berlin-Ost	2 494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284	—	—	—
Mecklenburg-Vorpommern	266	217	120	130
Brandenburg	480	426	172	325
Sachsen-Anhalt	522	351	210	295
Sachsen	557	387	135	217
Thüringen	317	235	107	194
ohne Berlin-Ost	2 142	1 616	744	1 161
mit Berlin-Ost	2 426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22	—	—	—
Mecklenburg-Vorpommern	29	24	6	19
Brandenburg	67	38	46	92
Sachsen-Anhalt	61	19	19	39
Sachsen	42	18	23	36
Thüringen	41	18	34	33
ohne Berlin-Ost	240	117	128	219
mit Berlin-Ost	262	—	—	—

h 07

Arbeitsrechtssachen

Verfahren I. Instanz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1 928	—	—	—
Mecklenburg-Vorpommern	2 211	16 789	47 719	25 100
Brandenburg	2 869	15 900	44 927	30 618
Sachsen-Anhalt	2 759	16 104	34 773	27 253
Sachsen	3 799	31 080	77 324	53 782
Thüringen	1 883	20 423	78 821	32 846
ohne Berlin-Ost	13 521	100 296	283 564	169 599
mit Berlin-Ost	15 449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1 863	—	—	—
Mecklenburg-Vorpommern	2 114	8 292	25 828	33 526
Brandenburg	2 842	8 887	32 408	39 135
Sachsen-Anhalt	2 652	10 157	17 805	34 373
Sachsen	3 693	17 399	58 088	65 066
Thüringen	1 825	11 464	57 252	44 285
ohne Berlin-Ost	13 126	56 199	191 381	216 385
mit Berlin-Ost	14 989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256	—	—	—
Mecklenburg-Vorpommern	263	8 760	30 254	22 051
Brandenburg	512	7 525	19 226	10 770
Sachsen-Anhalt	426	6 373	24 623	17 606
Sachsen	590	14 271	34 471	20 912
Thüringen	275	9 234	31 915	20 476
ohne Berlin-Ost	2 066	46 163	140 489	91 815
mit Berlin-Ost	2 322	—	—	—

Arbeitsrechts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rufungen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208	—	—	—
Mecklenburg-Vorpommern	217	219	329	641
Brandenburg	374	291	223	1 065
Sachsen-Anhalt	237	286	196	283
Sachsen	437	468	336	1 424
Thüringen	202	184	315	1 033
ohne Berlin-Ost	1 467	1 448	1 399	4 446
mit Berlin-Ost	1 675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194	—	—	—
Mecklenburg-Vorpommern	209	197	187	282
Brandenburg	377	266	210	640
Sachsen-Anhalt	221	231	179	168
Sachsen	432	440	269	872
Thüringen	198	151	258	504
ohne Berlin-Ost	1 437	1 285	1 103	2 466
mit Berlin-Ost	1 631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19	—	—	—
Mecklenburg-Vorpommern	26	48	190	559
Brandenburg	47	70	86	530
Sachsen-Anhalt	33	88	96	211
Sachsen	70	98	165	735
Thüringen	20	53	223	756
ohne Berlin-Ost	196	357	760	2 791
mit Berlin-Ost	215	—	—	—

h 09

Arbeitsrechts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schwerden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50	—	—	—
Mecklenburg-Vorpommern	43	60	74	66
Brandenburg	48	126	46	93
Sachsen-Anhalt	37	51	41	97
Sachsen	82	88	95	197
Thüringen	35	66	56	91
ohne Berlin-Ost	245	391	312	544
mit Berlin-Ost	295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47	—	—	—
Mecklenburg-Vorpommern	43	49	72	44
Brandenburg	49	58	83	92
Sachsen-Anhalt	33	50	37	91
Sachsen	80	79	89	184
Thüringen	36	43	66	37
ohne Berlin-Ost	241	279	347	448
mit Berlin-Ost	288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5	—	—	—
Mecklenburg-Vorpommern	1	12	14	28
Brandenburg	4	72	35	31
Sachsen-Anhalt	4	5	9	12
Sachsen	6	15	21	33
Thüringen	1	24	14	64
ohne Berlin-Ost	16	128	93	168
mit Berlin-Ost	21	—	—	—

Strafsachen

Verfahren I. Instanz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4 664	—	—	—
Mecklenburg-Vorpommern	6 191	3 764	7 878	18 002
Brandenburg	7 455	5 130	13 916	25 090
Sachsen-Anhalt	8 532	5 108	11 248	22 672
Sachsen	10 892	6 474	13 564	37 748
Thüringen	5 610	3 410	9 590	25 485
ohne Berlin-Ost	38 680	23 886	56 196	128 997
mit Berlin-Ost	43 344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4 820	—	—	—
Mecklenburg-Vorpommern	6 276	3 308	6 194	14 371
Brandenburg	7 690	4 480	10 953	17 798
Sachsen-Anhalt	8 677	4 688	8 275	20 297
Sachsen	11 112	5 618	10 724	28 852
Thüringen	5 681	2 989	6 948	20 497
ohne Berlin-Ost	39 436	21 083	43 094	101 815
mit Berlin-Ost	44 256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273	—	—	—
Mecklenburg-Vorpommern	308	768	2 383	6 088
Brandenburg	359	1 012	3 988	11 199
Sachsen-Anhalt	410	837	3 806	6 995
Sachsen	528	1 386	4 016	12 755
Thüringen	244	665	3 353	8 280
ohne Berlin-Ost	1 849	4 668	17 546	45 317
mit Berlin-Ost	2 122	—	—	—

Straf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rufungen/Proteste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847	—	—	—
Mecklenburg-Vorpommern	767	248	48	176
Brandenburg	1 342	419	91	305
Sachsen-Anhalt	1 355	407	130	262
Sachsen	1 785	494	133	563
Thüringen	850	219	49	242
ohne Berlin-Ost	6 099	1 787	451	1 548
mit Berlin-Ost	6 946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863	—	—	—
Mecklenburg-Vorpommern	800	257	40	145
Brandenburg	1 423	425	84	274
Sachsen-Anhalt	1 406	401	153	203
Sachsen	1 878	556	102	447
Thüringen	872	226	48	156
ohne Berlin-Ost	6 379	1 865	427	1 225
mit Berlin-Ost	7 242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37	—	—	—
Mecklenburg-Vorpommern	19	10	18	54
Brandenburg	39	33	40	71
Sachsen-Anhalt	39	45	21	101
Sachsen	84	22	53	169
Thüringen	23	16	20	106
ohne Berlin-Ost	204	126	152	501
mit Berlin-Ost	241	—	—	—

Strafsachen

Verfahren II. Instanz — Beschwerden				
	Eingänge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476	—	—	—
Mecklenburg-Vorpommern	351	227	219	619
Brandenburg	506	359	667	838
Sachsen-Anhalt	558	329	515	689
Sachsen	829	474	632	1 214
Thüringen	496	286	325	565
ohne Berlin-Ost	2 740	1 675	2 358	3 925
mit Berlin-Ost	3 216	—	—	—
	Erledigung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474	—	—	—
Mecklenburg-Vorpommern	350	222	231	585
Brandenburg	513	350	614	716
Sachsen-Anhalt	558	319	492	678
Sachsen	850	465	596	1 129
Thüringen	490	271	339	551
ohne Berlin-Ost	2 761	1 627	2 272	3 659
mit Berlin-Ost	3 235	—	—	—
	noch anhängige Verfahren			
	1989	1990	1991	1992
Berlin-Ost	9	—	—	—
Mecklenburg-Vorpommern	11	16	4	29
Brandenburg	13	22	75	130
Sachsen-Anhalt	16	26	51	62
Sachsen	14	23	59	144
Thüringen	11	26	16	30
ohne Berlin-Ost	65	113	205	395
mit Berlin-Ost	74	—	—	—

h 13

Kassationsachen

	Eingänge		
	1990 ¹⁾	1991	1992 ²⁾
Mecklenburg-Vorpommern	99	1 255	674
Brandenburg		1 531	1 144
Sachsen-Anhalt		1 059	1 879
Sachsen	108	1 897	1 882
Thüringen	90	1 444	1 223
Berlin	162	414	167
gesamt	459	7 600	6 969
	Erledigungen		
	1990 ¹⁾	1991	1992 ²⁾
Mecklenburg-Vorpommern	22	609	650
Brandenburg		999	904
Sachsen-Anhalt		688	1 170
Sachsen	30	796	1 723
Thüringen	10	533	970
Berlin	31	339	373
gesamt	93	3 964	5 790
	noch anhängige Verfahren		
	1990	1991	1992 ³⁾
Mecklenburg-Vorpommern	104	750	774
Brandenburg	173	705	950
Sachsen-Anhalt	36	407	802
Sachsen	128	1 229	1 330
Thüringen	110	1 021	1 274
Berlin	131	206	0
gesamt	682	4 318	5 130

1) = 1. Oktober—31. Dezember 1990

2) = Januar—Oktober 1992

3) = Oktober 1992

Rehabilitierungssachen

	Eingänge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577	6 378	2 598
Brandenburg		8 897	3 965
Sachsen-Anhalt		10 519	5 163
Sachsen		20 438	7 284
Thüringen	1 992	7 659	3 205
Berlin	1 644	3 193	3 706
gesamt	4 213	57 084	25 921
	Erledigungen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1 710	2 788
Brandenburg		2 389	5 397
Sachsen-Anhalt		1 701	5 459
Sachsen		6 025	11 487
Thüringen	51	2 669	5 658
Berlin	49	1 546	3 137
gesamt	100	16 040	33 926
	noch anhängige Verfahren		
	1990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897	5 565	6 149
Brandenburg	1 117	7 625	6 869
Sachsen-Anhalt	2 676	11 494	10 492
Sachsen	14 413	11 540
Thüringen	3 348	8 338	7 159
Berlin	1 595	3 232	3 801
gesamt	50 667	46 010

¹⁾ = 1. Oktober—31. Dezember 1990

Verwaltungsrechtssachen

Verfahren I. Instanz			
	Eingänge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74	1 373	3 751
Brandenburg	177	1 395	7 079
Sachsen-Anhalt	30	2 009	5 559
Sachsen	99	2 292	6 328
Thüringen	62	1 379	3 333
gesamt	442	8 448	26 050
	Erledigungen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25	528	2 030
Brandenburg	60	444	2 993
Sachsen-Anhalt	23	734	2 470
Sachsen	64	1 175	3 949
Thüringen	40	497	2 027
gesamt	212	3 378	13 469
	noch anhängige Verfahren		
	1990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83	928	2 594
Brandenburg	200	1 151	5 477
Sachsen-Anhalt	89	1 364	4 109
Sachsen	231	1 348	3 753
Thüringen	71	953	2 260
gesamt	674	5 744	18 193

¹⁾ = 1. Oktober—31. Dezember 1990

Verwaltungsrechtssachen

Verfahren II. Instanz			
	Eingänge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1	39	211 (57)
Brandenburg	5	33	442 (216)
Sachsen-Anhalt	6	94	182 (28)
Sachsen		169	634 (109)
Thüringen	6	53	158 (14)
gesamt	18	388	1 627 (424)
	Erledigungen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36	95 (16)
Brandenburg	4	16	303 (133)
Sachsen-Anhalt	1	68	110 (7)
Sachsen		117	532 (86)
Thüringen	4	26	136 (15)
gesamt	9	263	1 176 (257)
	noch anhängige Verfahren		
	1990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1	4	119 (54)
Brandenburg	1	18	151 (80)
Sachsen-Anhalt	5	31	99 (27)
Sachsen	12	64	166 (48)
Thüringen	4	31	52 (7)
gesamt	23	148	587 (216)

¹⁾ = 1. Oktober—31. Dezember 1990

() = darunter Berufungen

Sozialrechtssachen

Verfahren I. Instanz			
	Eingänge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45	670	1 651
Brandenburg	69	884	2 257
Sachsen-Anhalt	29	718	1 790
Sachsen	150	1 467	3 732
Thüringen	88	788	1 908
gesamt	381	4 527	11 338
	Erledigungen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5	230	667
Brandenburg	9	237	1 216
Sachsen-Anhalt		302	1 198
Sachsen	34	579	1 980
Thüringen	7	263	936
gesamt	55	1 611	5 997
	noch anhängige Verfahren		
	1990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65	505	1 509
Brandenburg	70	717	1 737
Sachsen-Anhalt	66	482	1 079
Sachsen	201	1 089	2 840
Thüringen	87	612	1 584
gesamt	489	3 405	8 749

¹⁾ = 1. Oktober—31. Dezember 1990

Sozialrechtssachen

Verfahren II. Instanz			
	Eingänge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5	19 (19)
Brandenburg	2	8	50 (38)
Sachsen-Anhalt		18	82 (79)
Sachsen		26	96 (89)
Thüringen		10	27 (21)
gesamt	2	67	274 (246)
	Erledigungen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1	13 (13)
Brandenburg	2	4	28 (15)
Sachsen-Anhalt		8	28 (27)
Sachsen		8	40 (36)
Thüringen		1	24 (20)
gesamt	2	22	133 (111)
	noch anhängige Verfahren		
	1990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4	9 (9)
Brandenburg	4	26 (25)
Sachsen-Anhalt	10	67 (65)
Sachsen	2	20	79 (69)
Thüringen	9	12 (9)
gesamt	47	193 (177)

¹⁾ = 1. Oktober—31. Dezember 1990

() = darunter Berufungen

Finanzrechtssachen

Verfahren I. Instanz			
	Eingänge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7	92	82
Brandenburg	7	98	228
Sachsen-Anhalt	4	67	85
Sachsen	3	86	155
Thüringen	3	90	83
gesamt	24	433	633
	Erledigungen		
	1990 ¹⁾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1	36	62
Brandenburg		26	134
Sachsen-Anhalt		28	36
Sachsen		28	98
Thüringen		49	41
gesamt	1	167	371
	noch anhängige Verfahren		
	1990	1991	1992
Mecklenburg-Vorpommern	7	63	84
Brandenburg	7	79	173
Sachsen-Anhalt	6	45	94
Sachsen	5	63	120
Thüringen	4	45	87
gesamt	29	295	558

¹⁾ = 1. Oktober—31. Dezember 1990

Nummer 21

Personalvermehrung

Die Bewältigung der den Landesjustizverwaltungen der neuen Länder nach der Vereinigung übertragenen Aufgaben erforderte eine erhebliche Vermehrung des Personals.

Dies wird nachstehend durch die Angaben des Personalbestandes ausgewählter Länder zu den Stichtagen 3. Oktober 1990 und 1. Januar 1993 dargestellt. Der Personalbestand wird zum jeweiligen Stichtag aufgliedert auf das Personal des Ministeriums des betreffenden Landes (abgekürzt Min) und das Personal der Gerichte einschließlich Grundbuchämter und Registergerichte und der Staatsanwaltschaften (abgekürzt G/St). Abgeordnetes Personal aus den alten Ländern ist in Klammern angegeben.

Länder	Stichtag	
	3. Oktober 1990	1. Januar 1993
Brandenburg Min	6	164 (61)
G/St	1 525	2 846 (498)
Sachsen Min	5	174
G/St	2 079	4 440
Sachsen-Anhalt Min	3 (2)	123 (52)
G/St	714	2 147 (194)

Kurz- und mittelfristige Planungen:

Alle neuen Länder haben eine weitere Personalvermehrung vorgesehen, um dem steigenden Geschäftsanfall gerecht werden zu können. Im einzelnen bestehen beispielsweise folgende Planungen einiger Länder:

Sachsen: Im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 der Justiz ist nur noch mit einer geringfügigen Personalvermehrung zu rechnen (voraussichtlicher Endbedarf: 180 Mitarbeiter). Bei den Gerichten und Staatsanwaltschaften wird mit einem Endpersonalbedarf von 7 000 Mitarbeitern gerechnet.

Sachsen-Anhalt: Nach dem Haushaltsplan für 1993 betrug die Zahl der Stellen für Beamte und Richter 3 284 und die Zahl der Stellen für sonstige Mitarbeiter 1725.

Im Haushaltsplanentwurf für 1994 sind weitere 289 neue Stellen beantragt. Mittelfristig sind ab 1995 nochmals 800 neue Stellen vorzusehen.

Nummer 22

Büroflächen in der Justiz (Ministerien und zugehörige Geschäftsbereiche)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benötigten für die Erfüllung der ihnen seit der Vereinigung übertragenen ständig zunehmenden Aufgaben nicht nur vermehrt Personal, sondern sie hatten auch einen erheblich gesteigerten Raumbedarf. Dabei beschränkten die neuen Länder unterschiedliche Wege, um die zum Zeitpunkt der Vereinigung am 3. Oktober 1990 noch völlig unzureichenden Büroflächen bereits bis zum 1. Januar 1993 erheblich zu vergrößern. Sie haben Neubaumaßnahmen, aber auch sogenannte Investo-

renmodelle, sowie Ankauf und Anmietungen von Gebäudeflächen vorgenommen.

Wie sich die Büroflächen zu den genannten Stichtagen 3. Oktober 1990 bis zum 1. Januar 1993 vergrößert haben, wird am Beispiel einiger neuer Länder in der nachstehenden Tabelle ebenso dargestellt, wie die kurz- und mittelfristigen Planungen der jeweiligen Länder bezüglich der Größe der von ihnen zu nutzenden Büroflächen im Endausbaustadium (3. Spalte).

Länder	Stichtag		Planung Endausbau
	3. Oktober 1990	1. Dezember 1993	
Brandenburg	...	252 000 m ²	282 000 m ²
Sachsen	72 000 m ²	147 000 m ²	ca. 200 000 m ²
Sachsen-Anhalt	ca. 40 000 m ²	ca. 80 000 m ²	ca. 140 000 m ²

Nummer 23

Investitionsausgaben

Alle neuen Länder haben für den Bereich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erhebliche Investitionen vorgenommen und planen eine weitere Steigerung der Investitionen in den kommenden Haushaltsjahren.

Beispielsweise hat das Land *Brandenburg* zu den einschlägigen Ansätzen in den Haushaltsplänen/Finanzplänen für Investitionen folgende Angaben gemacht:

Haushaltsjahr 1992:	47 660 000 DM
Haushaltsjahr 1993:	56 857 000 DM
Haushaltsjahr 1994:	99 124 000 DM
Haushaltsjahr 1995:	142 326 000 DM
Haushaltsjahr 1996:	123 902 000 DM
Haushaltsjahr 1997:	117 448 000 DM.

In *Sachsen* sind Investitionen insbesondere im Baubereich vorgesehen. Bis zum 1. Januar 1993 wurden im Bereich der Justizliegenschaften insgesamt 90 Mio. DM für Baumaßnahmen ausgegeben, und zwar 1991 24 Mio. DM und 1992 66 Mio. DM. Der voraussichtliche Endbedarf wird derzeit auf ca. 800 Mio. DM geschätzt.

Sachsen-Anhalt hat aufgeteilt auf die Einzelpläne 11, Hauptgruppe 8 (sonstige Ausgaben für Investitionen und Investitionsfördermaßnahmen) und Einzelplan 20 (Justiz/Bauunterhaltung, kleine und große Hochbaumaßnahmen) folgende Investitionen getätigt bzw. veranschlagt:

Einzelpläne

	Epl. 11		Epl. 20
	a) Ansatz	b) abgeschlossene Haushaltsmittel	
Haushaltsjahr 1991	3 852 000 DM	2 915 209 DM	4,5 Mio. DM
Haushaltsjahr 1992	16 022 000 DM	15 469 010 DM	19 Mio. DM
Haushaltsjahr 1993	18 152 100 DM		61,4 Mio. DM *)

*) In diesem Betrag sind alleine für Sicherheitsmaßnahmen in den Justizvollzugsanstalten rund 30 Mio. DM veranschlagt.

Im Jahre 1991 standen in *Thüringen* an Investitionsmitteln, d. h. Mitteln der Hauptgruppe 8, für die Ausstattung der Gerichte und Vollzugsanstalten mit Fahrzeugen, Mobiliar, EDV-Geräten, Bürogeräten und dergleichen 6,7 Mio. DM zur Verfügung. Davon wurden 5,8 Mio. DM (= ca. 87%) verauslagt.

Für Investitionen für Baumaßnahmen wurden 1991 8 022 000 DM bereitgestellt. Hierunter fallen — wie auch in *Sachsen-Anhalt* — im wesentlichen Baumaßnahmen in den Justizvollzugsanstalten (Einbau von Sicherheitseinrichtungen jeglicher Art, Sanierung von Haftzellen und anderer Unterkünfte etc.), Sanierung von Dienstgebäuden, Einbau von Heizungsanla-

gen, grundlegende Instandsetzungsmaßnahmen bei einzelnen Kreisgerichten.

Im Haushaltsjahr 1992 wurden an Investitionsmitteln der Hauptgruppe 8 12 581 000 DM bereitgestellt, von denen 11 925 000 DM (= 94,8%) verausgabt wurden.

Im Baubereich standen im Haushaltsjahr 1992 17 099 000 DM bereit.

Von den vorstehend angegebenen Investitionen im Bereich der Baumaßnahmen wurden von den Staatshochbauämtern 1991 und 1992 insgesamt 22 986 000 DM (= 91,5%) für Baumaßnahmen eingesetzt.

Nummer 24

Ausstattung mit EDV

Die neuen Länder bemühen sich um eine flächendeckende Ausstattung der jeweiligen Landesjustizverwaltungen mit elektronischer Datenverarbeitung.

Dabei wird nachstehend das Vorgehen im einzelnen beispielhaft ausführlich am Lande *Brandenburg* dargestellt und bei den übrigen neuen Ländern darüber hinaus auf Besonderheiten hingewiesen:

Nachdem in *Brandenburg* die Bezirks- und Kreisgerichte neu organisiert worden waren, begann sehr schnell eine Erstausrüstung mit Textunterstützungssystemen (Bildschirm Schreibmaschinen, Display-Maschinen und normalen elektrischen Schreibmaschinen). In Einzelfällen wurden in den Gerichten auch schon Personalcomputer für Textverarbeitung installiert.

Die zu lösenden Aufgaben machten es erforderlich Schwerpunkte zu setzen.

Die beiden wichtigsten Verfahrenslösungen betrafen zunächst das Grundbuchverfahren in den Kreisgerichten und die Registerverfahren in den drei Registergerichten. Es wurde jeweils auf bestehende Entwicklungen zurückgegriffen, beim Grundbuchverfahren auf das System SOLUM und beim Handels- und Genossenschaftsregister auf das System HAREG. Beide Verfahren laufen auf Mehrplatzmaschinen mit dem Betriebssystem UNIX und sind inzwischen fast flächendeckend eingesetzt. Bis zum Jahresende 1993 sollen auch die letzten Grundbuchämter ausgestattet sein. Daneben werden die Gerichtskassen mit Buchungssystemen ausgestattet, die die Verbuchung der gerichtlichen Kostenrechnungen und Sollstellungen ermöglichen. Die Zahlstellen der Vollzugsanstalten erhielten Personalcomputer für die Tagesbuchungen.

Im Ministerium der Justiz selbst wurde für verschiedene dringende Anwendungen der Einsatz von Einzelplatz-Personalcomputern realisiert, insbesondere bei Tabellen im Haushalt, bei Personalübersichten, bei Haushaltsplanbewirtschaftung, bei Rechtsbereinigung und Dokumentation. Daneben wurden in relativ großer Zahl Sachbearbeiter und Kanzleikräfte mit Personalcomputern ausgestattet.

Die Staatsanwaltschaft Potsdam erhielt ein spezielles Programmsystem zur Auswertung der Bezirkskriminalität mit Personalcomputer-Einsatz.

Die Staatsanwaltschaften insgesamt erhielten bzw. erhalten derzeit jeweils ein Netzwerk für die Erfassung und Verwaltung der Namenskartereien.

Im Bezirksgericht Frankfurt/Oder wird ein kleines Netzwerk im Haushaltsbereich erprobt. Kurzfristig sind noch folgende künftige Projekte vorgesehen:

- a) Ausstattung einer Vollzugsanstalt (Vollzugsgeschäftsstelle und Zahlstelle) mit einem Mehrplatzsystem und entsprechender Fachsoftware als Erprobungsfeld.
- b) Ausstattung des Finanzgerichts Cottbus mit einem Geschäftsstellen-, Kanzlei- und Richterunterstützungsverfahren.
- c) Ausbau der schon erwähnten Verfahren SOLUM und HAREG zu kombinierten Eintragungs- und Datenhaltungsverfahren (mit jeweils weiteren Softwarestufen und Rechnertypen).
- d) Aufbau von kleinen Verbundlösungen oder einheitlich gestalteten Installationen von Personalcomputer-Technik in Verwaltungsabteilungen größerer Behörden unter Einschluß von Bibliotheken, Haushalts- und Personalbereichen.
- e) Basisausstattung mit Informationstechnik-Ausstattung im zu errichtenden Oberlandesgericht Brandenburg.
- f) Die Verwaltungsgerichte des Landes sollen baldmöglichst, insbesondere der Bereich der Asylverfahren, mit einem JURIS-Anschluß und ggf. mit Geschäftsstellen-Verfahren ausgestattet werden.
- g) Bei bestimmten Verfahrensarten (Schuldnerverzeichnis, Zwangsversteigerung usw.) sollen mit lokalen Kleinsystemen Verfahrensbearbeitungen unterstützt werden.

Mittelfristig werden voraussichtlich die Informationstechnik-Maßnahmen so gestaltet werden können, daß sie als integrierte Anwendungen in den Behörden sowohl die Kanzlei- und Geschäftsstellen einbeziehen, die Richter oder Staatsanwälte unterstützen und für Verwaltungsbereiche entsprechende Kapazitäten zur Verfügung stehen. Dies wird sich auf die Landgerichte und die Amtsgerichte, je nach aktuellem Bedarf und Größe der Behörde beziehen und ein mehrjähriges Ausstattungsprogramm erfordern. Einzelheiten dazu werden zur Zeit erarbeitet.

Mecklenburg-Vorpommern hat sich bereits 1991 entschieden, mit dem eingangs dargestellten Ziel der flächendeckenden Vollausrüstung mit elektronischer Datenverarbeitung die Gerichte und Staatsanwaltschaften und deren Verwaltungen umfassend mit Geräten und Verfahren der Informationstechnik auszustatten.

Die Landesjustizverwaltung beabsichtigt einheitlich bei Gerichten und Staatsanwaltschaften die Justizverfahrensunterstützung ARGUS in fachspezifischen Ausprägungen einzusetzen. ARGUS basiert auf sogenannten Personalcomputer-Netzwerken nach der Server-Client-Architektur, bei der die Betriebs-

steme OS/2 und PC-DOS eingesetzt werden. ARGUS ist eine Datenverarbeitungslösung, die grundsätzlich alle Arbeitsplatztypen (Dezernenten, Geschäftsstelle, Kanzlei) in einer integrierten Anwendung unterstützen kann.

Mecklenburg-Vorpommern hat aus Gründen der Finanzierbarkeit, aber auch aus organisatorischen und aus Gründen der Entwicklungskapazitäten sich bei der Realisierung zu einem stufenweisen Vorgehen entschlossen und dabei folgende Prioritäten gesetzt:

- a) Bis zum Jahre 1993 ist eine Vollausrüstung der Grundbuchämter und der Registergerichte bei den Amtsgerichten sowie der Arbeitsgerichte vorgesehen.
- b) Anschließend sollen zunächst die Geschäftsstellen der Staatsanwaltschaften, dann der Schreibdienst der sonstigen Gerichte und Staatsanwaltschaften mit elektronischer Datenverarbeitung ausgerüstet werden.
- c) Folgen sollen sodann die Zivil- und Familienabteilungen der Amtsgerichte, die Verwaltungsgerichte, die Strafabteilungen der Amtsgerichte und schließlich die sonstigen Kollegialgerichte.

Auch *Sachsen* hat erhebliche Investitionen im Bereich d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 vorgenommen, so wurden insgesamt bis zum 1. Januar 1993 im Bereich der ordentlichen Gerichte und Staatsanwaltschaften insgesamt 18,3 Mio. DM hierfür investiert. Die Investitionen für EDV-Ausrüstung im Bereich der Grundbuchämter beliefen sich auf insgesamt 7 Mio. DM. Neben 7 Mio. DM für Telefonanlagen wurden alleine für EDV- und Telefonverkabelungen 2 Mio. DM aufgewandt.

Auch die Landesjustizverwaltung *Sachsen-Anhalt* hat schon Ende des Jahres 1991 damit begonnen, die Justizbehörden des Landes nach und nach mit moderner EDV-Technik auszustatten. Dort sind Schwerpunkt der Automationsprojekte gegenwärtig jene Arbeitsbereiche der Justiz, die derzeit einer besonders starken Arbeitslast ausgesetzt sind oder denen — etwa im Hinblick auf den wirtschaftlichen Aufschwung im Lande — eine Art Nadelöhrfunktion zukommt. *Sachsen-Anhalt* plant bis Ende 1993 eine Ausstattung mit EDV im folgenden Umfang:

- a) 22 von derzeit 40 Grundbuchämtern sollen mit dem Programmsystem SOLUM ausgestattet worden sein.
- b) Bei allen vier Handelsregistergerichten wird das EDV-Programm HAREG eingesetzt werden.
- c) 11 Amtsgerichte sollen mit dem von den Landesjustizverwaltungen Bayern übernommenen pro-

grammierbaren Textverarbeitungssystem TEXAS ausgestattet sein, und zwar 8 Amtsgerichte in Nachlaßsachen und 3 Amtsgerichte in Familiensachen.

- d) Zur Unterstützung der Arbeitsabläufe bei allen 6 Arbeitsgerichten soll — wenn auch in unterschiedlichen Realisierungsstufen — das EDV-Programm SHARK eingesetzt werden.
- e) 5 von 6 Staatsanwaltschaften bzw. staatsanwalt-schaftlichen Zweigstellen werden mit der ersten Stufe des Geschäftsstellenautomationsprogramms SIJUS-STRAF arbeiten.
- f) Weiter ist geplant, die zwei Staatsanwaltschaften zur Bearbeitung umfangreicher Wirtschaftsstrafsachen mit leistungsfähiger EDV-Technik auszustatten.
- g) Letztlich wird in 7 Vollzugsanstalten das Programmsystem BASIS zur Unterstützung der Arbeitsabläufe in der Arbeitsverwaltung und der Vollzugsgeschäftsstelle eingesetzt werden.

Ein weiterer Ausbau des Einsatzes der EDV-Technik zur Unterstützung der Arbeitsabläufe im Bürobetrieb der Gerichte und Staatsanwaltschaften in allen automationsgeeigneten Arbeitsbereichen (z. B. Zivilprozeß- und Zwangsvollstreckungssachen) ist für die nächsten Jahre geplant. Dabei ist beabsichtigt, die Arbeitsplätze der Staatsanwaltschaften und Richter organisatorisch und technisch einzubeziehen.

Sachsen-Anhalt beteiligt sich an der Entwicklung und Pilotierung des vollelektronischen Grundbuchs und Handelsregisters und wird diese Technik — im Rahmen der finanziellen Möglichkeiten — so schnell wie möglich landesweit einführen.

Die Landesjustizverwaltung *Thüringen* plant in den für den Einsatz der elektronischen Datenverarbeitung geeigneten Bereichen im Zeitraum 1993 bis 1998 eine erhebliche Vergrößerung der mit EDV ausgestatteten Arbeitsplätze. Hervorzuheben sind unter anderem folgende Projekte:

- a) Im Justizministerium soll die Zahl der mit EDV ausgestatteten Arbeitsplätze im Bereich der Schriftgutverwaltungsgeschäftsstellen von 8 auf 14, bei der Bürokommunikation die Zahl der Referenten/Sachbearbeiter von 26 auf 80, die der Geschäftsstellen von 8 auf 14 und die im Kanzleibereich von 15 auf 23 wachsen.
- b) Die Landesjustizverwaltung *Thüringen* hat eine Vergrößerung der Anzahl der Arbeitsplätze mit EDV-Ausrüstung in dem genannten Zeitraum bei den ordentlichen Gerichten und Staatsanwaltschaften wie folgt vorgesehen:

EDV-Projekt	Richter/Rechtspfleger	Geschäftsstellen	Kanzlei
Grundbuch SOLUM . . .	von 70 auf 90	von 28 auf 34	von 47 auf 60
Grundbuch MAGB	von 65 auf 80	von 28 auf 32	von 44 auf 54
Verwaltungsabteilung Textbearbeitung Datenbankanweisung . .	von 24 auf 86	von 14 auf 55	von 39 auf 120
Geschäftsstellen- automation durch Datenverarbeitungs- verfahren	von 12 auf 94	von 15 auf 360	von 205 auf 540

c) Entsprechende Vergrößerungen der Anzahl der Arbeitsplätze von Richtern/Rechtspflegern, in den Geschäftsstellen und der Kanzlei sind auch bei den Verwaltungsgerichten, den Sozialgerichten und beim Finanzgericht und bei den Arbeitsgerichten vorgesehen.

Thüringen plant ebenfalls die Landesanzwaltschaft, die derzeit noch kein EDV-Projekt realisiert hat, bis

1998 auf jeweils 6 EDV-Arbeitsplätze in den drei genannten Bereichen auszuweiten.

Im Justizvollzug ist ein EDV-Projekt geplant, durch das die Zahl der Arbeitsplätze in dem genannten Zeitraum von 12 auf 80 im Kanzleibereich vergrößert werden soll.

Nummer 25

Situation der Grundbuchämter

Die Länder haben zur Situation der Grundbuchämter folgende Angaben gemacht:

Brandenburg verfügte in den Grundbuchämtern zum 1. Januar 1993 insgesamt über 476 Mitarbeiter, davon 86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abgeordnete. Dem gehobenen Dienst gehörten 136, dem mittleren und einfachen 340 an.

In *Mecklenburg-Vorpommern* ist das Personal erheblich vermehrt worden.

So betrug der Personalstand mit der Übernahme der Grundbücher in die Zuständigkeit der Justiz durch das Gesetz über die Führung der Grundbücher vom 16. Juli 1991 insgesamt 194 Mitarbeiter.

Hiervon waren als Verfüger tätig 54
und als Mitarbeiter in den Geschäftsstellen
und im Schreibdienst 140.

Zum 1. Januar 1993 war der Personalstand auf insgesamt 368 Kräfte angewachsen.

Hiervon waren Rechtspfleger/
Bereichsrechtspfleger 58
Bedienstete in Ausbildung
zum Bereichsrechtspfleger 18
Bedienstete im Geschäftsstellen-
und Schreibdienst 124
ABM-Kräfte 168.

Hinzu kommen noch 24 aus den alten Ländern abgeordnete Rechtspfleger. Mecklenburg-Vorpommern errechnet im Zusammenhang mit seinen kurz- und mittelfristigen Planungen ein über den sogenannten Pensenschlüssel der alten Länder hinausgehenden Bedarf an Rechtspflegern. Nach dem sogenannten Pensenschlüssel würde sich lediglich eine Zahl von 81 bis 84 Rechtspflegern ergeben. Wegen der Besonderheiten (Rückstände, Schwierigkeiten der Eintragungsverfahren, über dem Durchschnitt der alten Länder liegender Geschäftsanfall, Umschreibung auf Loseblatt) hält Mecklenburg-Vorpommern aber einen 50 bis 100 % höheren Bedarf, also 130 bis 160 Rechtspfleger, für notwendig.

Im nachgeordneten Bereich bedarf es der Bereitstellung zusätzlicher Planstellen zur Übernahme von ABM-Kräften, um den weiteren Einsatz der Datenverarbeitung in den Grundbuchämtern zu sichern.

In den Grundbuchämtern kommt das Datenverarbeitungsprogramm ARGUS (Allgemeines Rechtsinformations- und Gerichtsverfahrens-Unterstützungssystem) in einer Grundbuchversion zur Anwendung. Die 31 Grundbuchämter sind im Eintragungsbereich mit entsprechender Hardware und Software ausgestattet, d. h. die Umschreibung der Grundbücher auf Loseblatt-Form und Eintragung in diese erfolgen mit ARGUS-Grundbuch. Dieses ARGUS-Programm bildet auch die Grundlage für das künftige maschinelle Grundbuch.

Bezüglich der Büroflächen der Grundbuchämter in Mecklenburg-Vorpommern ist hervorzuheben, daß sich zum Zeitpunkt der Vereinigung am 3. Oktober 1990 die Grundbuchämter noch gemeinsam mit den Katasterämtern im Bereich der ehemaligen Liegenschaftsdienste befanden. Erst mit der Übernahme in die Zuständigkeit der Justiz am 16. Juli 1991 erfolgte die örtliche Trennung von Grundbuchamt und Katasteramt. Zum Stichtag 1. Januar 1993 sind von den 31 Grundbuchämtern des Landes 14 zusammen mit dem Amtsgericht und 17 außerhalb des Amtsgerichts untergebracht. 12 Grundbuchämter verfügen gegenwärtig über ausreichende Büroflächen. Im Landesdurchschnitt steht jedem Grundbuchamt eine Bürofläche von ca. 170 m² zur Verfügung, die allgemein nicht als ausreichend angesehen wird.

Mecklenburg-Vorpommern plant die weitere örtliche Eingliederung der derzeit noch getrennt untergebrachten Grundbuchämter in die Amtsgerichte.

Sachsen ist es gelungen, das Personal im Bereich der Grundbuchämter, das zum Zeitpunkt der Vereinigung bei ca. 200 Mitarbeitern gelegen hat, bis zum 1. Januar 1993 auf 869 Mitarbeiter zu erhöhen.

Die zur Verfügung stehende Bürofläche ist im gleichen Zeitraum etwa versiebenfacht worden.

Sachsen-Anhalt konnte das Personal der Grundbuchämter von 194 Bediensteten am 3. Oktober 1990 auf 305 Bedienstete am 1. Januar 1993 erhöhen. Unterstützend waren hier aus den Alt-Ländern abgeordnete Bedienstete in einer Vielzahl von Fällen in Form von Teilabordnungen und im Wege der Partnerschaftshilfe tätig.

Hieran anknüpfend plant Sachsen-Anhalt auch zur kurzfristigen Unterstützung der Grundbuchämter Einsätze von Rechtspflegern aus den alten Ländern, insbesondere aus Niedersachsen, an Wochenenden durchzuführen. Darüber hinaus ist beabsichtigt, noch in diesem Jahr 100 Lehrer, denen eine Entlassung droht, zunächst zur Ausbildung in Grundbuchangelegenheiten für drei Monate in den Bereich des Ministeriums der Justiz abzuordnen. Nach einem erfolgreichen Abschluß der Ausbildung soll ein Einsatz als beauftragter Rechtspfleger in den Grundbuchämtern erfolgen.

Die zum 3. Oktober 1990 auch in Sachsen-Anhalt für die Grundbuchämter noch völlig unzureichenden Büroflächen konnten durch den Auszug der Katasterämter aus den gemeinsamen Räumlichkeiten in den Gerichtsgebäuden vergrößert werden. Derzeit wird angestrebt, sieben (von insgesamt 37) Grundbuchämtern, die noch anderweitig untergebracht sind, in die Gerichtsgebäude zurückzuführen.

Die Situation in den Grundbuchämtern des Landes Thüringen ist der in den vier vorgenannten neuen Ländern im wesentlichen vergleichbar.

Auch Thüringen konnte seinen Personalbestand von am 3. Oktober 1990 105 Bediensteten auf am 1. Januar 1993 466 Bedienstete erhöhen, davon stammten 24 aus den alten Ländern. Mit EDV sind von den 35 Grundbuchämtern Thüringens 28 ausgestattet. Eine Ausstattung der restlichen 7 Ämter wird in diesem Jahr erfolgen.

Auch in Thüringen waren die Büroflächen für die Grundbuchämter zum 3. Oktober 1990 völlig unzureichend.

Bis zum 1. Januar 1993 ist es jedoch gelungen, sie etwa zu vervierfachen. Die meisten Grundbuchämter sind inzwischen hinreichend und sachgemäß — wenn auch zum Teil noch nicht dauerhaft — untergebracht. Kurzfristig wird die Verbesserung für die verbliebenen 6 von 35 Grundbuchämtern angestrebt, bei 2 von diesen 6 ist sie inzwischen (Stand: Mai 1993) erreicht. Bei einem Grundbuchamt sind insgesamt größere Renovierungen unter Denkmalschutz erforderlich. Die Raumkapazität ist aber ausreichend. Bei einem weiteren stehen Mietverhandlungen vor dem Abschluß.

In den Haushaltsplänen sind die Mittel für die Personalkosten, insbesondere für die Honorierung der westdeutschen Mitarbeiter in den Grundbuchsonderteams zur zügigen Abarbeitung der Antragsrückstände mit 600 000 DM und für den Transport der Grundbuchakten von Barby nach Thüringen mit 320 000 DM enthalten. Die Stellen für die Thüringer Grundbuchbediensteten sind ausreichend.

Für die restliche EDV-Ausstattung ist in den Haushaltsplänen ein Mittelansatz in Höhe von 3 672 500 DM enthalten.

Nummer 26

**Personalbestand und -einsatz
Richter und Staatsanwälte
der neuen Bundesländer**

Stand: 1. Januar 1993

	Richter	Staatsanwälte
I. Gesamtzahl der im Landesdienst Tätigen	2 273	941
II. Davon		
1. aus dem Dienst der DDR übernommene	628	378
2. neu eingestellte		
a) Juristen mit der Befähigung zum Richteramt	842	312
b) Diplom-Juristen	28	5
c) sonstige	3	—
3. (aus den Altländern)		
a) abgeordnete/zugewiesene	511	173
b) versetzte	195	52
4. Senioren	61	8
5. noch zu überprüfende	5	13
III. es sind tätig		
1. i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1 677	—
2. bei den Staatsanwaltschaften	11	868
3. in den Fachgerichtsbarkeiten (soweit ausgegliedert)		
a) Verwaltungsgerichtsbarkeit	168	—
b) Finanzgerichtsbarkeit	20	—
c) Arbeitsgerichtsbarkeit	258	—
d) Sozialgerichtsbarkeit	52	1
4. in der Landesjustizverwaltung	102	17
5. in den Altländern (Abordnungen)	103	47
IV. Die Zahl der Planstellen beträgt ¹⁾	1 944	745

¹⁾ ohne Sachsen

(Differenzen zwischen den Abschnitten I und II und dem Abschnitt III beruhen auf teilweise unvollständigen Meldungen.)

Nummer 27

**Überprüfung der Richter
und Staatsanwälte**

	Anträge auf Übernahme ¹⁾ , gestellt von		Übernommene	
	Richtern	Staatsanwälten	Richter	Staatsanwälte
Berlin ²⁾	276 (95)		43	
Brandenburg	172 (86)	129 (37)	145	112
Mecklenburg-Vorpommern	129 (59)	109 (40)	83	38
Sachsen	336	193	212	115
Sachsen-Anhalt	198 (68)	115 (43)	111	58
Thüringen	144 (62)	88 (63)	117	60
insgesamt ²⁾	1 889		1 094	

	Offene Verfahren ²⁾³⁾	Angefochtene Ablehnungsentscheidungen ²⁾	Davon rechtskräftig geworden ²⁾⁴⁾
Berlin ⁵⁾	4	15	14
Brandenburg ⁵⁾	16	39	23 (9)
Mecklenburg-Vorpommern ⁶⁾	82	65	0
Sachsen ⁵⁾	104	104	0
Sachsen-Anhalt ⁵⁾	49	72	23 (0)
Thüringen ⁵⁾	17	22	5 (0)
insgesamt	272	317	65

¹⁾ Berücksichtigt werden nur Anträge, die bis zur Entscheidung nicht zurückgenommen worden sind; in Klammern wird, soweit bekannt, die Zahl der vor der Entscheidung zurückgenommenen Anträge genannt.²⁾ Die angegebenen Zahlen beziehen sich auf Richter und Staatsanwälte.³⁾ Die Zahl erfaßt noch offene Verwaltungsverfahren und noch offene gerichtliche Verfahren.⁴⁾ In Klammern ist die Zahl der für die Bewerber positiven Gerichtsentscheidungen angegeben.⁵⁾ Stand: April 1993⁶⁾ Stand: Februar 1993

Nummer 28**Übersicht über das aus den alten Bundesländern und dem Bund in die neuen Bundesländer abgeordnete Justizpersonal**

(Stand: 31. Dezember 1992)

Land	Richter, Staatsanwälte, sonstige Beamte des höheren Dienstes	Rechtspfleger, sonstige Beamte des gehobenen Dienstes	Urkundsbeamte der Geschäftsstelle, sonstige Beamte des mittleren Dienstes
Baden-Württemberg . . .	146	81	17
Bayern	122	53	6
Berlin	5	—	—
Bremen	11	4	2
Hamburg	28	16	1
Hessen	100	54	16
Niedersachsen . . .	114	68	47
Nordrhein-Westfalen ¹⁾	191	162	87
Rheinland-Pfalz	41	25	18
Saarland	4	—	—
Schleswig-Holstein	18	24	3
Bund	6	16	10
insgesamt	786	503	207

¹⁾ Stand: 20. Januar 1993**Nummer 29****Zusätzliche einigungsbedingte Stell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bei den obersten Bundesgerichten und beim Generalbundesanwalt im Einzelplan 07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und im Einzelplan 11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

	Haushaltsjahr		
	1990 (3. Nachtrag)	1991	1992
BGH Epl. 07	10 R 2 Hilfsstellen 7 R 1 — wissenschaftl. Mitarbeiter —	—	—
GBA Epl. 07	2 R 6 6 R 3 2 R 2 Hilfsstellen 5 R 1 — wissenschaftl. Mitarbeiter —	10 A 15 (Arbeitsgruppe Reg. Krim.)	2 R 6 6 R 3 (Kw 31.12.96)
BVerwG Epl. 07	—	1 R 8 4 R 6 4 R 1 Hilfsstellen — wissenschaftl. Mitarbeiter —	—
BFH Epl. 07	1 R 8 5 R 6 1 R 2 Hilfsstellen 1 R 1 — wissenschaftl. Mitarbeiter —	—	—
BAG Epl. 11	1 R 8 2 R 6	1 R 8 2 R 6	—
BSG Epl. 11	1 R 8 2 R 6	1 R 8 2 R 6	—

Zusätzliche einigungsbedingte Mittel im Einzelplan 19 — Bundesverfassungsgericht — —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

Mit dem 3. Nachtrag zum Haushalt für 1990 sind Mittel für 16 zusätzliche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beim Bundesverfassungsgericht (= 1 Mitarbeiter für jeden Richter am Bundesverfassungsgericht) bereitgestellt worden.

Nummer 30

Juristenausbildung

1. Universitätsausbildung

Studenten, die vor dem 1. September 1990 im Beitrittsgebiet ein Studium der Rechtswissenschaft (mit Ausnahme eines Studiums an der Juristischen Hochschule Potsdam-Eiche oder einer vergleichbaren Einrichtung) aufgenommen hatten, können das Studium nach den insoweit fortgeltenden Bestimmungen des DDR-Rechts (als Diplomjuristen) abschließen; auch ein Abschluß mit dem ersten juristischen Staatsexamen (nach § 5 a Deutsches Richtergesetz) ist möglich.

Zahl der Studenten der Rechtswissenschaft im Beitrittsgebiet am 3. Oktober 1990 (Wintersemester 1990/1991)

Humboldt-Universität Berlin	2 320
Hochschule für Recht und Verwaltung Potsdam-Babelsberg *)	562
Universität Leipzig	412
Universität Halle	390
Universität Jena	509
Gesamtzahl	4 193

*) Vormalige Akademie für Staats- und Rechtswissenschaft, an der leitende Kader für die Verwaltung ausgebildet wurden. Das dortige Studium war kein rein juristisches Studium; es führte zum Abschluß „Diplomstaatswissenschaftler“. Erst ab April 1990 ist versucht worden, diesen Studiengang als rechtswissenschaftliches Studium fortzuführen.

2. Besonderer juristischer Vorbereitungsdienst

Studenten, die ihr juristisches Studium zwischen 1990 und 1993 abgeschlossen haben oder noch abschließen, können in einem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der zweieinhalb Jahre dauert, die Befähigung zum Richteramt nach § 5 Deutsches Richtergesetz erwerben. Abweichend vom allgemein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nach § 5 b Deutsches Richtergesetz umfaßt der besondere Vorbereitungsdienst neben der rechtspraktischen Ausbildung Einführungslehrgänge vor den jeweiligen Pflichtstationen in Zivil- und Strafsachen sowie in der Verwaltung. Die Einführungskurse dienen dazu, noch vorhandene Ausbildungsdefizite im bundesdeutschen Recht auszugleichen. Die Rechtspraktikanten im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sind von den neuen Ländern und dem Land Berlin eingestellt worden. Da die neuen Länder wegen der beschränkten Ausbildungskapazitäten zunächst noch keinen eigen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anbieten konnten, sind die Rechtspraktikanten in den Alt-Ländern (im jeweiligen Partnerland) ausgebildet worden. Zwischenzeitlich führt ein Teil der neuen Länder

die Ausbildung der Rechtspraktikanten im eigenen Land durch (vgl. unter 3.).

Rechtspraktikanten im besonderen Vorbereitungsdienst *)

	1990	1991	1992	1993
Berlin	32	58	25	74
Brandenburg	25	29	ca. 10	
Mecklenburg-Vorpommern	24	43	43	1
Sachsen	nicht bekannt			
Sachsen-Anhalt	51	69	46	
Thüringen	40	42	24	

*) Genannt werden jeweils die Zahlen der in dem betreffenden Jahr eingestellten Rechtspraktikanten.

3. Aufbau eines eigen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es in den neuen Ländern

Brandenburg führt die Ausbildung im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seit dem 1. September 1992 im eigenen Land durch. Ein allgemeiner juristischer Vorbereitungsdienst soll ab dem 1. November 1993 angeboten werden.

Mecklenburg-Vorpommern bietet seit dem 1. April 1992 einen eigenen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an. Seit dem 3. Mai 1993 werden auch Referendare im allgemein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ausgebildet.

Sachsen bildet Rechtspraktikanten im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seit dem 1. September 1991 aus.

Sachsen-Anhalt führt seit dem 1. Oktober 1992 einen besonderen Vorbereitungsdienst durch; zum 1. Mai 1993 ist erstmals ein allgemeiner juristischer Vorbereitungsdienst eingerichtet worden.

Thüringen wird eine eigene Ausbildung im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im Sommer 1993 aufnehmen.

4. Assistentenausbildung

In der DDR folgte nach dem juristischen Studium, das regelmäßig mit dem akademischen Grad eines Diplomjuristen abgeschlossen wurde, eine für die Berufsgruppen unterschiedliche, in der Regel einjährige Praxisausbildung (Assistentenausbildung). Die Absolventen dieser Assistentenausbildung erwarben

die auf den jeweiligen juristischen Beruf beschränkte Befähigung als Richter, Staatsanwalt, Notar oder Rechtsanwalt. Die Absolventen wurden grundsätzlich erst nach erfolgreichem Abschluß dieser Praxisausbildung zu den juristischen Berufen des Richters, Staatsanwalts, Notars oder Rechtsanwalts zugelassen.

Nach den Maßgaben des Einigungsvertrages (Anlage I Kapitel I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Nr. 8 y ee) konnten Richter-, Staatsanwalts-, Rechtsanwalts- und Notarassistenten ihre Ausbildung nach den bisher-

gen Bestimmungen beenden; bis zum 31. Dezember 1991 konnte noch ein Assistentenverhältnis begründet werden. Auch die Absolventen, die ihre Assistentenausbildung nach dem 3. Oktober 1990 erfolgreich beendeten, haben die jeweilige spezielle Berufsbefähigung als Richter, Staatsanwalt, Notar oder Rechtsanwalt erworben. Nach dem 3. Oktober 1990 hatte die Assistentenausbildung nur noch eine geringe Bedeutung; die meisten Absolventen sind in den besonderen juristischen Vorbereitungsdienst eingetreten, der bessere Berufsperspektiven versprach.

Richter- und Staatsanwaltsassistenten im Beitrittsgebiet

	am 3. Oktober 1990 vorhandene		bis zum 31. Dezember 1991 noch eingestellte	
	Richterassistenten	Staatsanwaltsassistenten	Richterassistenten	Staatsanwaltsassistenten
Berlin	—	nicht bekannt	—	—
Brandenburg	15	0	15	2
Mecklenburg-Vorpommern	8	1	nicht bekannt	
Sachsen	—	nicht bekannt	—	—
Sachsen-Anhalt	7*)	0	nicht bekannt	
Thüringen	—	nicht bekannt	—	—

*) Hiervon haben nur 3 die Ausbildung abgeschlossen.

5. Erwerb der Befähigung zum Berufsrichter oder der Befähigung zum Staatsanwalt durch Einarbeitung

Diplomjuristen (mit Ausnahme der Absolventen der Hochschule Potsdam-Eiche), die im Zeitpunkt des Beitritts eine mindestens dreijährige Berufserfahrung besaßen, konnten nach einer erfolgreichen Einarbeitung von einem Jahr bei einem Gericht die Befähigung zum Berufsrichter und durch eine einjährige Einarbeitung bei der Staatsanwaltschaft die Befähigung zum Staatsanwalt erwerben. Von dieser Möglichkeit haben die neuen Länder und auch Berlin — wie die nachfolgenden Zahlen verdeutlichen — nur wenig Gebrauch gemacht.

Länder	Einarbeitung zum Richter
Berlin	0
Brandenburg	22
Mecklenburg-Vorpommern . .	2
Sachsen	1
Sachsen-Anhalt	0
Thüringen	0

Anmerkung: Die Einarbeitungszeit ist überwiegend noch nicht beendet. Angaben über den Erfolg der Einarbeitung und die Zahl der zu Richtern ernannten Einarbeitungsjuristen sind daher noch nicht möglich.

Nummer 31

Bereichsrechtspfleger

1. Zahl der Bereichsrechtspfleger am 1. Januar 1993

Berlin	ca. 90	Kurse im Grundbuch-, Zivil-, Familien-, Kosten-, Zwangsvollstreckungs-, Nachlaß- und Vormundschaftsrecht sowie Registerrecht.
Brandenburg	354	
Mecklenburg-Vorpommern	165	
Sachsen	629	
Sachsen-Anhalt	231	
Thüringen	266	
Gesamtzahl	1 735	

In den einzelnen Ländern wurden folgende Fortbildungsmaßnahmen durchgeführt:

a) Berlin

Es wurden für Bereichsrechtspfleger folgende Fortbildungsmaßnahmen angeboten:

- Schulung in Zivilprozessesachen (155 Doppelstunden)
- Schulung in Zwangsvollstreckungssachen (165 Doppelstunden)
- Schulung im Grundbuchwesen (280 Doppelstunden).

b) Brandenburg

Für Bedienstete, die Rechtspflegeraufgaben in den Grundbuchämtern wahrnehmen, wurden folgende Aus- und Fortbildungsmaßnahmen durchgeführt:

2. Übersicht über die für Bereichsrechtspfleger durchgeführten Aus- und Fortbildungsmaßnahmen

Für Gerichtssekretäre und andere Personen, die als Bereichsrechtspfleger Rechtspflegeraufgaben wahrnehmen, wurden in Zusammenarbeit mit den jeweiligen Partnerländern zunächst als Sofortmaßnahmen kurzzeitige „Crashkurse“ durchgeführt. Im Vordergrund stand jedoch seit Anfang 1991 eine gründlichere Fortbildung: Für das Personal, das Rechtspflegeraufgaben wahrnehmen sollte, fanden mehrmonatige (meist 3 Monate) Fortbildungskurse in bestimmten Bereichen der Rechtspflegertätigkeit statt, z. B.

Crash-Kurse

Nr.	Beginn	Ende	Teilnehmerzahl	Ausbildungsort
1	5. November 1990 7. Januar 1991	16. November 1990 11. Januar 1991	15	Bad Münstereifel
	1. Juli 1991	19. Juli 1991		
2	12. Dezember 1990	27. März 1991	14	Berlin
3	28. Januar 1991	26. April 1991	27	Bad Münstereifel
4	15. April 1991	16. September 1991	8	Berlin
5	6. Januar 1992	10. April 1992	29	Bad Münstereifel
6	1. Oktober 1992	15. Februar 1993	38	Borkheide
7	8. Januar 1993	11. April 1993	13	Bad Münstereifel

Fortbildungsveranstaltungen

Nr.	Beginn	Ende	Teilnehmerzahl	Veranstaltungsort
1	4. November 1991	23. November 1991	27	Wustrau
2	18. Mai 1992	22. Mai 1992	28	Eichwalde
3	22. Juni 1992	26. Juni 1992	20	Eichwalde
4	24. August 1992	28. August 1992	22	Werder/Havel

Auf den übrigen Sachgebieten der Rechtspflegertätigkeit wurden folgende Fortbildungsveranstaltungen angeboten:

1. Juli bis 14. August 1992	Bad Münstereifel	Nachlaßrecht	31 Teilnehmer
11. Januar bis 8. April 1993	Bad Münstereifel	Familienrecht	13 Teilnehmer
11. Januar bis 8. April 1993	Bad Münstereifel	ZPO/Zwangsvollstreckungsrecht	10 Teilnehmer
11. Januar bis 2. April 1993	Radebeul	Registerrecht	8 Teilnehmer
13. April bis 30. April 1993	Bad Münstereifel	Nachlaßrecht	13 Teilnehmer

c) Mecklenburg-Vorpommern

Für Bereichsrechtspfleger wurden Aus- bzw. Fortbildungskurse auf den Sachgebieten Registersachen, Nachlaßsachen, Familien- und Vormundschaftssachen, Grundbuchsachen, Zivilprozeß- und Zwangsvollstreckungssachen sowie Strafvollstreckungssachen durchgeführt. An den Kursen nahmen insgesamt 165 Bedienstete teil, die insgesamt 270 Teilnehmerplätze belegten, und zwar

Kurs in Registersachen:	19 Teilnehmer
Kurs in Nachlaßsachen:	31 Teilnehmer
Kurs in Familien- und Vormundschaftssachen:	28 Teilnehmer
Kurs in Grundbuchsachen:	70 Teilnehmer
Kurs in Zivilprozeß- und Zwangsvollstreckungssachen:	21 Teilnehmer
Kurs in Strafvollstreckungssachen:	28 Teilnehmer
Kurs im Grundbuchwesen:	73 Teilnehmer

d) Sachsen

Die Bereichsrechtspfleger wurden im jeweiligen Fachgebiet geschult und fortgebildet. Es ist beabsichtigt, den ausgebildeten Bereichsrechtspflegern durch entsprechende Kurse weitere Bereiche zu eröffnen. Im

übrigen erfolgen die Aus- und Fortbildungsmaßnahmen nach Einzelbedürfnissen.

e) Sachsen-Anhalt

Im Jahr 1990 fanden Fortbildungslehrgänge im Grundbuchrecht statt. 1991 wurden Fortbildungskurse im Vollstreckungswesen, Nachlaß-, Strafvollstreckungs-, Familien-, Register- und Grundbuchrecht durchgeführt. 1992 wurden folgende Kurse angeboten: Vereins- und Güterrecht, Strafvollstreckungs-, Nachlaß- und Familienrecht, Vollstreckungswesen, Grundbuchrecht, ZPO/Kosten, Kurse für die Wahrnehmung von Aufgaben in der Justizverwaltung und für die Wahrnehmung von Aufgaben der Arbeits-, Verwaltungs- und Sozialgerichtsbarkeit. 1993 fand eine Schulung für Aufgaben des Bezirksrevisors statt; weitere Fortbildungsmaßnahmen werden im Laufe des Jahres durchgeführt.

f) Thüringen

In Thüringen sind folgende Aus- und Fortbildungsmaßnahmen für Bedienstete, die Rechtspflegeraufgaben wahrnehmen, angeboten worden:

Jahr	Zeitpunkt	Fachgebiet	Anzahl der Teilnehmer
1991	2. September bis 2. Dezember	ZPO	31
	1. März bis 27. September	Nachlaß	34
	3. Juni bis 12. Dezember	Vormundschaft	34
1992	6. Januar bis 3. April	ZPO	26
	30. März bis 26. Juni	Register	13
	4. Mai bis 4. August	ZPO	24
	1. Juni bis 9. Oktober	ZVG (Lehrgang in Sachsen)	6
	5. bis 16. Oktober und 26. Oktober bis 6. November	ArbGericht	15
	ab 19. Oktober ab Sommer	VerwGericht (Lehrgang in Sachsen) Geschäftsleiter (Ausbildung in Hessen)	1 5
1993	11. Januar bis 8. April	Nachlaß	20
	11. Januar bis 2. April	Register (Lehrgang in Sachsen)	3
	19. April bis 30. Juli	ZPO	
	6. September bis 3. Dezember ab Frühjahr	Vormundschaft Verwaltungs-Gericht	
	ab Frühjahr ab Frühjahr	Strafvollstreckung (Ausbildung in Hessen) Geschäftsleiter (Ausbildung in Hessen)	20

Neben diesen Maßnahmen wurde den Bediensteten 1992 die Teilnahme an überregionalen Fortbildungsveranstaltungen ermöglicht. Dies gilt auch für 1993; zusätzlich werden einwöchige Tagungen angeboten.

Nummer 32**Verwendung der Gerichtssekretäre nach dem 3. Oktober 1990**

Nach dem 3. Oktober 1990 sind die im Justizdienst verbliebenen Gerichtssekretäre überwiegend als Bereichsrechtspfleger eingesetzt worden. Nach Anlage I Kapitel I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Nr. 3 Buchstabe a) Absatz 2 des Einigungsvertrages können Gerichtssekretäre Rechtspflegeraufgaben auf Sachgebieten wahrnehmen, die ihnen nach dem bisherigen Recht der DDR zur Erledigung zugewiesen waren oder zugewiesen werden konnten. Nach näherer Bestimmung des Landesrechts können sie mit weiteren Rechtspflegeraufgaben betraut werden, wenn sie aufgrund von Fortbildungsmaßnahmen zur Erledigung dieser Aufgaben geeignet sind.

Ein kleiner Teil der Gerichtssekretäre ist auch als Gerichtsvollzieher oder in der Justizverwaltung eingesetzt oder mit Aufgaben des mittleren Dienstes betraut worden.

So waren etwa in Berlin-Ost am 3. Oktober 1992 110 Gerichtssekretäre vorhanden. Hiervon sind 34 als

Bereichsrechtspfleger, 5 als Gerichtsvollzieher und 14 für Aufgaben des mittleren Dienstes eingesetzt worden; 5 sind Rechtspflegeranwärter geworden; 43 sind ausgeschieden und 9 in die Arbeits- und Sozialgerichtsbarkeit gewechselt (Verwendung unbekannt).

Von den in Sachsen im Zeitpunkt des Beitritts vorhandenen ca. 300 Justizsekretären sind 25 Gerichtsvollzieher geworden, der Rest der im Justizdienst verbliebenen Justizsekretäre wird als Bereichsrechtspfleger eingesetzt.

In Sachsen-Anhalt waren am 3. Oktober 1992 ca. 200 Gerichtssekretäre vorhanden. 139 Gerichtssekretäre sind als Bereichsrechtspfleger, 22 als Gerichtsvollzieher und 39 für sonstige Funktionen (Geschäftsleiter, Rechtspflegeranwärter, mittlerer Dienst) eingesetzt worden.

Nummer 33**Personalbestand und -einsatz von Rechtspflegern oder vergleichbaren Beschäftigten (auch Angestellte) der neuen Bundesländer**

Stand: 1. Januar 1993

I.	Gesamtzahl der im Landesdienst Tätigen	2 227
II.	davon	
	1. Übernommene der DDR ¹⁾	520
	2. Neueingestellte ¹⁾	97
	3. Aus den Altländern	
	a) abgeordnete	478
	b) versetzte	127
	4. Senioren	20
III.	Von der Gesamtzahl sind tätig	
	1. bei Gerichten	1 925
	2. bei Staatsanwaltschaften	186
	3. bei den Landesjustizverwaltungen	62
IV.	Die Zahl der Planstellen beträgt	2 160

¹⁾ Feststellung wegen Verwaltungsaufwandes nur teilweise möglich

Nummer 34

Rechtspflegerausbildung

1. Zahl der Rechtspflegeranwärter am 1. Januar 1993

Länder	Zahl der Rechtspflegeranwärter	Davon werden in den Alt-Ländern ausgebildet
Berlin	288 ¹⁾	0
Brandenburg . . .	219	219
Mecklenburg-Vorpommern . . .	111	111 ²⁾
Sachsen	166	nicht bekannt
Sachsen-Anhalt . .	102	46
Thüringen	72	72
Gesamtzahl	958	

Anmerkungen:

- 1) Berlin bildet für Brandenburg 72 Rechtspflegeranwärter aus.
 2) 40 Anwärter des Einstellungsjahrgangs 1992 werden ihre praktische Ausbildung in Bremen und Schleswig-Holstein, ihre Fachstudien aber an der Fachhochschul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in Güstrow/Mecklenburg-Vorpommern absolvieren.

2. Aufbau einer eigenen Rechtspflegerausbildung in den neuen Ländern

Brandenburg beabsichtigt, mit Berlin eine Verwaltungsvereinbarung zu treffen, wonach jährlich 60 Anwärter an der Fachhochschule in Berlin ausgebildet werden sollen. In *Mecklenburg-Vorpommern* absolvieren bereits 40 Anwärter des Einstellungsjahrgangs 1992 ihre Fachstudien an der Fachhochschul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in Güstrow. *Sachsen* hat die Fachhochschulausbildung von Anfang an (seit Januar 1992) im eigenen Land durchgeführt, und zwar in der Justizschule Radebeul. Im Juli 1992 wurde die Fachhochschule der sächsischen Verwaltung Meißen gegründet, in die künftig der Fachbereich Rechtspflege integriert wird. Es wird angestrebt, ab 1994 auch sämtliche Praxisabschnitte, die heute teilweise noch in den Partnerländern Baden-Württemberg und Bayern absolviert werden, in Sachsen durchzuführen. *Sachsen-Anhalt* bildet seit dem 1. August 1992 Rechtspflegeranwärter an der neu errichteten Fachhochschul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und Rechtspflege in Benneckenstein aus; die fachpraktische Ausbildung findet nunmehr ebenfalls im eigenen Lande statt. *Thüringen* strebt eine staatsvertragliche Lösung mit dem Land Hessen an, wonach die Fachhochschule in Rothenburg an der Fulda die Fachhochschulausbildung der Rechtspflegeranwärter des Landes Thüringen mit übernehmen soll.

Nummer 35

Ausbildung des mittleren Dienstes

1. Zahl der Anwärter im mittleren Dienst am 1. Januar 1993

Berlin	289 ¹⁾
Brandenburg	57
Mecklenburg-Vorpommern . .	115
Sachsen	200 ²⁾
Sachsen-Anhalt	178
Thüringen	nicht bekannt

- 1) Davon 182 aus dem Beitrittsgebiet
 2) Davon 32 Gerichtsvollzieheranwärter

2. Ausbildungssituation in den einzelnen Ländern

In *Berlin* wird die Ausbildung für den mittleren Justizdienst beim Ausbildungsreferat der Präsidentin des Kammergerichts durchgeführt. Die Ausbildung der Anwärter aus dem mittleren Dienst des Landes *Brandenburg* erfolgt in Nordrhein-Westfalen. *Mecklenburg-Vorpommern* läßt bisher seine Anwärter in Schleswig-Holstein (Justizschule Amtsgericht Lübeck), Nordrhein-Westfalen (Justizschule Brakel), Hamburg (Justizschule Amtsgericht Hamburg) und in Bremen (Verwaltungsschule Bremen) ausbilden. *Sachsen* bildet die Anwärter bereits selbst aus; Ausbildungsstätte ist die Justizschule Radebeul. *Sachsen-Anhalt* läßt die Anwärter des mittleren Dienstes im Partnerland Niedersachsen (vorwiegend in Landgerichtsbezirken, die an Sachsen-Anhalt angrenzen) ausbilden. *Thüringen* führt im eigenen Land Aus- und Fortbildungslehrgänge für Beschäftigte durch, die Aufgaben des mittleren Dienstes wahrnehmen.

Nummer 36**Fortbildung der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dem Dienst der DDR****1. Überblick**

Nach einer zwischen Bund und Ländern abgestimmten Konzeption führten die Landesjustizverwaltungen seit September 1990 berufsbegleitende Fortbildungsveranstaltungen für Richter aus dem Beitrittsgebiet durch. In insgesamt 12 Lehrgängen, die jeweils eine Woche pro Monat über einen Gesamtzeitraum von einem Jahr stattgefunden haben, sind nach einer Einführung in das Verfassungsrecht Grundlagen des Gerichtsverfassungsrechts, des Zivil- und Zivilprozeßrechts sowie Kenntnisse des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s vermittelt worden. Für die Richter der besonderen Spruchkörper zum Verwaltungsrecht, Arbeitsrecht, Sozialrecht und Finanzrecht fanden besondere Lehrgänge in der Fortbildungsstätte Wustrau (Brandenburg) statt. Für Richter in den Kammern für Handelssachen wurden Lehrgänge mit dem Schwerpunkt Handels- und Gesellschaftsrecht von der Landesjustizverwaltung Berlin durchgeführt. 1991 fanden auch Fortbildungslehrgänge für Staatsanwälte und Strafrichter statt: Über einen Zeitraum von etwa sieben Monaten wurden berufsbegleitende Kurse (Gesamtdauer: 7 Wochen) durchgeführt, in denen die verfassungsrechtlichen Grundlagen des Straf- und Strafprozeßrechts, die Grundlagen des materiellen Strafrechts und schwerpunktmäßig Kenntnisse des Strafverfahrensrechts vermittelt wurden. Die Kosten der bisher genannten Lehrgänge wurden aufgrund Verwaltungsvereinbarung (vgl. Anlage Nr. 37) vom Bund und den Alt-Ländern je zur Hälfte getragen. Daneben haben die Neu-Länder — meist mit Unterstützung des jeweiligen Partnerlandes — regionale Fortbildungsmaßnahmen durchgeführt (vgl. dazu unter 2.).

Nach Auslaufen des vom Bund mitfinanzierten Grundfortbildungsprogramms bieten die neuen Länder und Berlin seit 1992 überregionale Fortbildungstagungen für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dem Beitrittsgebiet an. Für diese auf den speziellen Fortbildungsbedarf im Beitrittsgebiet ausgerichteten Veranstaltungen wird vo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ein Teil der Fortbildungskapazitäten der Tagungsstätte Wustrau zur Verfügung gestellt. Bereits seit 1990 hab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dem Beitrittsgebiet als Gäste an Fortbildungsveranstaltunge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in Trier teilgenommen. Seit dem 1. Januar 1993 sind die neuen Länder neben dem Bund und den Alt-Ländern Träger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die nunmehr neben der Einrichtung in Trier über eine zweite Tagungsstätte in Wustrau verfügt. Die Deutsche Richterakademie bietet bundesweit für alle Richter und Staatsanwälte Fortbildungsmaßnahmen an. Für die neuen Länder stehen Teilnehmerplätze sowohl in Trier als auch in Wustrau zur Verfügung.

2. Fortbildungsmaßnahmen in den einzelnen Ländern*a) Berlin*

Die Richter und Staatsanwälte werden seit der Übernahme berufsbegleitend geschult. Sie werden in kleinen Gruppen einmal wöchentlich im materiellen Recht und im Prozeßrecht — entsprechend ihrem tatsächlichen Einsatz im Zivil- oder Strafrecht — unterrichtet. Es ist beabsichtigt, die Schulung bis zum Ende der regulären Probezeit fortzusetzen.

b) Brandenburg

Nach Abschluß der Überprüfungsverfahren und Erreichung einer relativen Stabilität in der Geschäftsverteilung wurde in verstärktem Maße auf eine arbeitsplatzbezogene Fortbildung Wert gelegt. Übernommene Richter und Staatsanwälte nehmen an Fortbildungstagunge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teil, wobei die Frequenz von vier Teilnehmerplätzen bei jeweils zwei Paralleltagungen in Trier und in Wustrau beachtlich ist. Darüber hinaus entsendet das Land Brandenburg die übernommen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zu den Tagungen der überregionalen Fortbildung. Hier verfügt das Land Brandenburg über je 5 Plätze bei 18 Tagungen im Jahre 1993, also über insgesamt 90 Fortbildungsplätze. Nach Bedarf werden darüber hinaus Landestagungen durchgeführt. Weiter finden auf der Ebene der Bezirksgerichte und der Staatsanwaltschaften sogenannte Kolloquien für übernommene Richter und Staatsanwälte statt. Angelehnt an die Diskussionsformen der bewährten Referendarbeitsgemeinschaften erörtern erfahrene Berufskollegen mit den übernommenen Richtern und Staatsanwälten theoretische und praktische Probleme der täglichen Berufsarbeit.

c) Mecklenburg-Vorpommern

Im Jahr 1991 wurden auf dem Gebiet Zivilrecht/Verfassungsrecht folgende Fortbildungskurse angeboten:

- Siebenwöchiger Einführungskurs beim Bezirksgericht Neubrandenburg (15 bis 20 Teilnehmer)
- Zwölfmonatiger Grundlehrgang (vgl. oben unter 1.) mit 40 bis 60 Teilnehmern in Schwerin und 70 Teilnehmern in Rostock.

Im Strafrecht/Strafverfahrensrecht fanden für Strafrichter und Staatsanwälte Grundkurse in Neubrandenburg (25 Richter, 26 Staatsanwälte), Rostock

(27 Richter, 55 Staatsanwälte) und Schwerin (21 Richter, 31 Staatsanwälte) statt. An den Fortbildungsveranstaltungen auf Spezialgebieten (z. B. Arbeitsrecht, Verwaltungsrecht) in Wustrau (vgl. oben unter 1.) nahmen insgesamt 40 bis 50 Richter/Staatsanwälte aus Mecklenburg-Vorpommern teil. Während der gesamten Zeit wurden schließlich Hospitationsaufenthalte an Gerichten der Alt-Bundesländer angeboten.

1992 wurden als landeseigene Fortbildungskurse 9 Tagungen von jeweils drei bis vier Tagen zu einzelnen Themen auf den Gebieten Zivil- und Strafrecht sowie dem dazugehörigen Prozeßrecht durchgeführt (mit insgesamt ca. 130 Teilnehmern —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dem Dienst der DDR und Proberichter/West). An der überregionalen Fortbildung der neuen Länder in Wustrau (vgl. oben unter 1.) nahmen insgesamt 105 Teilnehmer aus Mecklenburg-Vorpommern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dem Dienst der DDR und Proberichter/West) teil. Schließlich wurden die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dem Dienst der DDR zusammen mit den Proberichtern/West durch ministerielle Schulungsmaßnahmen fortgebildet. Der genannte Personenkreis wird außerdem dezentral von den jeweiligen Dienststellen in Arbeitsgemeinschaften fortgebildet.

d) Sachsen

Im Jahre 1991 fand die Fortbildung im höheren Justizdienst im wesentlichen durch das Angebot der Partnerländer Bayern und Baden-Württemberg sowie durch erste landeseigene Tagungen statt. Neben der Vermittlung zivil- und strafrechtlichen Grundlagenwissens durch die über mehrere Monate gehende Grundfortbildung (vgl. unter 1.) wurden flächendeckende Fortbildungsmaßnahmen in ausgewählten Rechtsgebieten, etwa dem Vormundschaftsrecht, angeboten. Es wurden in Zusammenarbeit mit den Partnerländern Bayern und Baden-Württemberg einwöchige Einführungskurse für neueingestellte Assessoren und übernommene Richter und Staatsanwälte durchgeführt. Zudem wurde die Möglichkeit zur Hospitatio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geboten.

Im Jahre 1992 konnten die Richter und Staatsanwälte in Sachsen neben den überregionalen Fortbildungsveranstaltungen (vgl. oben unter 1.) Fortbildungsveranstaltungen in den Partnerländern besuchen; es wurden landeseigene Tagungen — wie Einführungstagungen für Assessoren und Schwerpunktlehrgänge etwa zum Familienrecht — angeboten. Außerdem standen Fortbildungsplätze bei den Tagunge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in Trier zur Verfügung. Im Jahr 1993 wird — neben den Fortbildungstagunge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in Trier und Wustrau und der überregionalen Fortbildung der neuen Länder und Berlins — wiederum eine landeseigene Fortbildung angeboten (stattgefunden haben z. B. Tagungen zum Betreuungs- und Verkehrsrecht), wobei ein Ausbau der landeseigenen Fortbildungsaktivitäten geplant ist.

e) Sachsen-Anhalt

Über die unter 1. beschriebenen Fortbildungsaktivitäten hinaus werden seit 1992 Arbeitsgemeinschaften zur Fortbildung der übernommen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durchgeführt. Diese Arbeitsgemeinschaften dauern an. Daneben finden seit 1993 in verstärktem Maße Planspieltagungen statt.

Um die Arbeitseffektivität zu steigern, werden für die Zukunft folgende weitere landesinterne Fortbildungsmaßnahmen erwogen:

- Die oben genannten Arbeitsgemeinschaften sollen auf Proberichter mit zweitem Staatsexamen erweitert werden.
- Auf Landgerichtsebene sollen praxisorientierte Tagesveranstaltungen durchgeführt werden, für die jeweils ein erfahrener Arbeitsgemeinschaftsleiter zur Verfügung steht (erörtert werden könnten z. B.: Vorbereitung und Gestaltung der mündlichen Verhandlung, Vergleichsstrategie, der Urkundenprozeß sowie typische Prozeßsituationen und die Möglichkeiten richterlicher Verfahrensgestaltung).
- „Besprechungstage“, die von erfahrenen Richtern aus Niedersachsen oder Senioren durchgeführt werden.
- Ferner sind zusätzliche Tagungen geplant, auf denen Arbeitstechniken zur zügigen Erledigung von Prozessen erlernt werden sollen.

f) Thüringen

Im Jahre 1991 wurde den Richtern und Staatsanwälten in Thüringen neben der Teilnahme an der oben unter 1. dargestellten Grundfortbildung die Teilnahme an Tagunge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sowie an den landeseigenen Fortbildungsveranstaltungen der Partnerländer Bayern, Hessen und Rheinland-Pfalz ermöglicht. Ferner konnten sie in Gerichten und Staatsanwaltschaften der Partnerländer hospitieren.

Zu Beginn des Jahres 1992 hat jeder der übernommen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zunächst eine vierwöchige Intensivschulung in Form von vier einwöchigen Tagungen erhalten. Es wurden fünf Kurse für Richter (jeweils zwei Wochen Zivilrecht und zwei Wochen Strafrecht) und drei Kurse für Staatsanwälte durchgeführt. Bei der Verpflichtung der Referenten waren die drei Partnerländer behilflich. Um eine kontinuierliche Betreuung zu gewährleisten, sind an den drei Bezirksgerichten Arbeitsgemeinschaften für die Zivil- und Strafrichter sowie für die Staatsanwälte eingerichtet worden. Diese Arbeitsgemeinschaften finden für die Dauer von einem Jahr jeweils an einem Tag pro Woche statt und umfassen je 8 Unterrichtsstunden. Für die als Arbeitsrichter tätigen Diplomjuristen ist ebenfalls eine Arbeitsgemeinschaft eingerichtet worden, die im vierzehntägigen Rhythmus stattfindet.

Alle Richter und Staatsanwälte hatten ferner die Möglichkeit, sich durch die Teilnahme an Tagungen fortzubilden. Im landeseigenen Fortbildungsprogramm sind ihnen dazu folgende Veranstaltungen angeboten worden: eine Tagung „Betreuungsrecht“ (Dauer 1 Woche), zwei Tagungen „Versorgungsausgleich“ (Dauer je 1 Woche), drei Tagungen „Freiwillige Gerichtsbarkeit“ (Dauer je 1 Woche).

Außerdem fanden acht einwöchige Seminare für Richter auf Probe bzw. Staatsanwälte auf Probe statt, um den hier erstmals als Richter tätigen Westassessoren und den übernommenen Ostrichtern (-staatsanwälten) die Einarbeitung in ihr Dezernat zu erleichtern. Bei der Verpflichtung der Referenten leisteten wiederum die Partnerländer Hilfestellung.

Im Rahmen des überregionalen Fortbildungsprogramms (vgl. oben unter 1.) konnten bei jeder der insgesamt 21 einwöchigen Tagungen 6 Richter oder Staatsanwälte aus Thüringen teilnehmen. Außerdem wurden für die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Thüringen Plätze bei den Tagungen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und den landeseigenen Tagungen der Partnerländer zur Verfügung gestellt.

Im Jahr 1993 werden 110 Tagungsplätze bei der Deutschen Richterakademie mit Teilnehmern aus Thüringen besetzt werden können. Neben dem überregionalen Fortbildungsprogramm der neuen Länder mit 18 Tagungen wird wiederum ein landeseigenes Fortbildungsprogramm für die Richter und Staatsanwälte durchgeführt.

Nummer 37

Verwaltungsvereinbarung über die Beteiligung an den Kosten für die Fortbildung der Richter in der (bisherigen) DDR 1990/199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as Land Baden-Württemberg,
der Freistaat Bayern,
das Land Berlin,
die Freie Hansestadt Bremen,
die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das Land Hessen,
das Land Niedersachsen,
das Land Nordrhein-Westfalen,
das Land Rheinland-Pfalz,
das Saarland und
das Land Schleswig-Holstein

schließen folgende

Vereinbarung:

§ 1

Im Rahmen der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und im Zusammenhang mit der bevorstehenden Vereinigung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wird die Fortbildung der Richter der DDR von Bund und Ländern nach Maßgabe der folgenden Bestimmungen gemeinsam gefördert.

§ 2

Gefördert werden Veranstaltungen, die die unterzeichnenden Länder für Richter und künftige Richter der DDR und der an deren Stelle tretenden Länder ab September 1990 während eines Jahres durchführen.

§ 3

(1) Es werden allgemeine Lehrgänge und Sofortlehrgänge durchgeführt.

(2) Die allgemeinen Lehrgänge finden bezirksweise nach Absprache zwischen den Ländern statt.

(3) Die Sofortlehrgänge finden in dem Institut für Weiterbildung in Wustrau statt. Es übernehmen die Sofortlehrgänge im

1. Verwaltungsrecht:
Baden-Württemberg, Bayern, Hessen und Nordrhein-Westfalen
2. Finanzrecht:
Nordrhein-Westfalen
3. Arbeitsrecht:
alle Länder
4. Sozialrecht:
Bayern, Berlin, Hamburg, Hesse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und Schleswig-Holstein.

§ 4

(1) Die Kosten eines Lehrgangs trägt grundsätzlich das veranstaltende Land, gegebenenfalls nach dem Anteil seiner Mitwirkung an einem Lehrgang. Der Bund übernimmt die Hälfte der nachgewiesenen Kosten der Referentenhonorare, der nach den Bestimmungen des Bundesreisekostengesetzes zu erstattenden Reisekosten der Referenten und der Kosten für Unterrichtsmaterial. Das Referentenhonorar beträgt höchstens 100 DM für eine Unterrichtsstunde.

(2) Förderungsfähig ist ein Höchstbetrag

1. bei den Sofortlehrgängen für Arbeitsrecht und für Sozialrecht von 290 000 DM (Bundesanteil: 145 000 DM) für 1990 und von 360 000 DM (Bundesanteil: 180 000 DM) für 1991,
2. bei den übrigen Lehrgängen von 1 760 000 DM (Bundesanteil: 880 000 DM) für 1990 und von 2 577 800 DM (Bundesanteil: 1 288 900 DM) für 1991.

(3) Die Zahlung des Bundesanteils für 1991 steht unter dem Vorbehalt der Bewilligung der Mittel durch den Haushaltsgesetzgeber.

(4) Soweit der Bund die Kosten nicht erstattet, werden sie von den Ländern nach dem Schlüssel des Königsteiner Abkommens vorbehaltlich anderer Regelungen zwischen beteiligten Ländern getragen.

(5) Die Durchführung des Programms 1991 steht unter dem Vorbehalt der Bewilligung von Mitteln durch die Haushaltsgesetzgeber der Länder.

§ 5

(1) Der Höchstbetrag der einem Land zustehenden Finanzierungsmittel des Bundes ergibt sich aus dem Verhältnis der einem Land entstandenen Kosten zur Gesamtheit der allen Ländern entstandenen Kosten. Das Verhältnis ist getrennt zu ermitteln für die Höchstbeträge nach § 4 Abs. 2 Nr. 1 und nach § 4 Abs. 2 Nr. 2.

(2) Reicht der Finanzierungsanteil des Bundes nicht aus, um die Förderung allen Ländern in vollem Umfang zukommen zu lassen, ist sie den betreffenden

Ländern entsprechend ihren Anteilen an den Gesamtkosten zu gewähren.

§ 6

(1) Die Länder teilen dem Bund für 1990 bis zum 1. Oktober 1990 und für 1991 bis zum 15. Februar 1991 unter Einreichung entsprechender Übersichten die Höhe der voraussichtlichen Kosten mit. Der Bund gewährt den Ländern zum 31. Oktober 1990 und 15. März 1991 auf der Grundlage der danach zu erwartenden Kosten Abschlagszahlungen im Rahmen der Höchstbeträge des § 4 Abs. 2.

(2) Die Länder legen dem Bund die Nachweisungen für die im Jahre 1990 angefallenen Kosten bis zum 15. Februar 1991 und die für das Jahr 1991 bis zum 30. September 1991 vor. Die Schlußzahlungen des Bundes werden am 31. Oktober 1991 fällig.

§ 7

Diese Vereinbarung tritt am 1. September 1990 in Kraft.

Ergänzung zur Verwaltungsvereinbarung über die Beteiligung an den Kosten für die Fortbildung der Richter in der vormaligen DDR 1990/199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as Land Baden-Württemberg,
der Freistaat Bayern,
das Land Berlin,
die Freie Hansestadt Bremen,
die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das Land Hessen,
das Land Niedersachsen,
das Land Nordrhein-Westfalen,
das Land Rheinland-Pfalz,
das Saarland und
das Land Schleswig-Holstein

schließen folgende ergänzende Vereinbarung zur Verwaltungsvereinbarung in der Fassung vom 31. August 1990:

§ 1

(1) Die vertragschließenden Länder führen neben den bereits vereinbarten Lehrgängen auch Lehrgänge im Strafrecht für Richter und Staatsanwälte sowie künftige Richter und Staatsanwälte aus den Ländern Mecklenburg-Vorpommer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Thüringen und Berlin durch.

(2) Die Lehrgänge finden aufgrund eines zwischen den veranstaltenden Ländern abgesprochenen Konzepts und nach Abstimmung zwischen dem veranstaltenden und dem begünstigten Land statt.

(3) Die Verwaltungsvereinbarung in der Fassung vom 31. August 1990 gilt auch für die Lehrgänge im Strafrecht mit nachfolgenden Ergänzungen.

§ 2

(1) Der förderungsfähige Höchstbetrag nach § 4 Abs. 2 Nr. 2 der Verwaltungsvereinbarung wird unter Einbeziehung der Lehrgänge im Strafrecht für 1991 auf 4 377 800 DM (Bundesanteil 2 188 900 DM) festgesetzt.

(2) Die Zahlung des über 1 288 900 DM hinausgehenden Bundesanteils steht dabei unter dem Vorbehalt der Bewilligung der Mittel durch den Haushaltsgesetzgeber.

§ 3

Die Länder teilen dem Bund bis zum 1. Mai 1991 die Höhe der voraussichtlichen Kosten für die Lehrgänge im Strafrecht mit. Der Bund gewährt den Ländern auf der Grundlage der danach zu erwartenden Kosten Abschlagszahlungen im Rahmen des Höchstbetrages des § 2.

§ 4

Die Ergänzungsvereinbarung tritt mit Wirkung vom 1. Januar 1991 in Kraft.

Nummer 38**Zahl der Rechtsanwäl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 Januar 1991	1. Januar 1992	1. Januar 1993
Brandenburg	296 (68)	464 (110)	577 (140)
Mecklenburg-Vorpommern	219 (57)	410 (103)	521 (130)
Sachsen	861 (191)	1 183 (284)	1 504 (387)
Sachsen-Anhalt	306 (86)	572 (166)	727 (218)
Thüringen	728 (192)*
insgesamt	4 057 (1 067)

() = Zahl der Rechtsanwältinnen

* Stand: 27. April 1993

Nummer 39**Zahl der Notar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 Januar 1991	1. Januar 1992	1. Januar 1993
Brandenburg	72 (53)	80 (54)	90 (54)
Mecklenburg-Vorpommern	49 (45)	48 (45)	54 (45)
Sachsen	119 (70)	156 (74)	175 (75)
Sachsen-Anhalt	63 (36)	76 (47)	92 (49)
Thüringen	73 (41)	91 (44)	107 (45)
insgesamt	376 (245)	451 (264)	518 (268)

() = Zahl der Notarinnen

Nummer 40**Studie „Gerichtsorganisation in den 5 neuen Bundesländern“****Zusammenfassung**

Die Untersuchung „Gerichtsorganisation in den 5 neuen Bundesländern“ wurde im 1. Halbjahr 1991 von der Kienbaum GmbH, Düsseldorf,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im Rahmen des Forschungsprogrammes „Strukturanalyse der Rechtspflege“ durchgeführt¹⁾. Methodisch basiert sie auf der Analyse von Geschäftsübersichten und auf Explorationsvor-Ort, insbesondere bezüglich der Geschäftsorganisation, der Büroausstattung, der baulichen und personellen Situation sowie der spezifischen Anpassungs-

und Umstellungsstrategien. In die nach Gerichtsgrößen geschichtete Zufallsstichprobe von Gerichten wurden die Kreisgerichte Dresden-Stadt, Königs Wusterhausen, Wismar und Potsdam-Stadt sowie das Bezirksgericht Dresden einbezogen.

Die Untersuchung hat folgende wesentlichen Ergebnisse erbracht:

In Zivilsachen waren die Eingänge in den Jahren 1989 und 1990 rückläufig; gleichwohl wuchsen die Überhänge aufgrund Personalmangels und wegen der Bindung vorhandener Arbeitskapazitäten durch Weiterbildungsmaßnahmen u. ä.. In Strafsachen zeigte sich derselbe Effekt noch krasser. In Arbeitssachen stiegen in den Jahren 1989 und 1990 sowohl die

¹⁾ Der komplette Untersuchungsbericht ist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rsg.), *Justiz im Umbruch*, Köln: Bundesanzeiger, 1993 publiziert.

Eingänge als auch die Überhänge um mehrere 100 bis 1 000 %.

Der Organisationsstand stellte sich im Februar/März 1991 wie folgt dar: Die Gerichtsgebäude waren teilweise in desolatem Zustand, auch die klassische Büroaustattung (Kopierer, Schreibmaschinen, etc.) war schlecht. Die schon für die Amtsgerichte der alten Länder festgestellten negativen Folgen einer extremen innergerichtlichen Arbeitsteilung²⁾ wurden durch häufige räumliche Trennung verschiedener Funktionsbereiche desselben Gerichts noch verschärft. Die Geschäftsstellen funktionierten oft erstaunlich gut, anscheinend nicht zuletzt auch deshalb, weil sie aufgrund schwacher personeller Besetzung überschaubar waren.

Die Gutachter empfehlen ein dreistufiges Vorgehen:

- kurzfristige Überlebenssicherung der Justiz durch partielle, streng aufgabenbezogene Schulung des übernommenen Personals, vermehrten Einsatz von Personal aus den alten Ländern, Installation

vorläufig nicht integrierter EDV-Lösungen an Einzelarbeitsplätzen und eine Verbesserung der Büro-Grundausrüstung;

- mittelfristige Sanierung durch umfassende Nachschulung des übernommenen Personals, Behebung des Personaldefizits sowie Ausbau und Integration und der EDV-Nutzungen;
- langfristige Optimierung der Gerichtsorganisation und der Geschäftsabläufe entsprechend den Vorschlägen für die Gerichte der alten Länder²⁾ d. h. durch Einrichtung richternah untergebrachter „Service-Einheiten“, die alle richterunterstützten Tätigkeiten übernehmen.

Den Justiz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änder, die in dem projektbegleitenden Beirat vertreten waren, haben den Untersuchungsbericht unmittelbar nach seiner Fertigstellung erhalten.

²⁾ vgl. Koetz/Frühauf, Organisation der Amtsgerichte, Köln (Bundesanzeiger-Verlag) 1992.

Nummer 41

Studie „Die absehbare Geschäftsbelastung der Gerich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Zusammenfassung

Die Studie wurde im Jahre 1991 von der PROGNOSE AG, Basel,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im Rahmen des Forschungsprogrammes „Strukturanalyse der Rechtspflege“ erstellt¹⁾. Wegen der zum damaligen Zeitpunkt nur unzureichenden statistischen Informationen über die Justiz der ehemaligen DDR konnte das herkömmliche prognostische Instrumentarium nur bedingt zur Abschätzung des voraussichtlichen Geschäftsanfalles eingesetzt werden. Methodisch mußte sich die Untersuchung daher auf die Hypothese stützen, daß die langfristige Angleichung der Lebensverhältnisse in den neuen Ländern an die der alten Länder in etwa zehn bis 20 Jahren zum gleichen Geschäftsanfall je Einwohner in den neuen wie in den alten Ländern führen wird.

Auf dieser Basis und unter Rückgriff auf eine von der PROGNOSE AG im Rahmen der Strukturanalyse der Rechtspflege für die alten Länder gestellte Prognose wurde der auf lange Sicht — etwa für das Jahr 2010 — zu erwartende Geschäftsanfall (Neueingänge erster Instanz pro Jahr) für das gesamte Beitrittsgebiet der Größenordnung nach wie folgt geschätzt:

— Zivilgerichte:	437 000
— Familiengerichte:	97 000
— Arbeitsgerichte:	79 000

¹⁾ Der komplette Untersuchungsbericht ist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rsg.), Justiz im Umbruch, Köln: Bundesanzeiger, 1993 publiziert.

— Strafgerichte:	189 000
— Verwaltungsgerichte:	33 500
— Finanzgerichte:	15 000
— Sozialgerichte:	48 000.

Einige Einflußfaktoren, die den Geschäftsanfall mit bestimmen, werden sich aufgrund des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Umbruchs und der anderen Ausgangsbedingungen in den neuen Ländern kurz- und mittelfristig in anderer Größenordnung auswirken als in den alten Ländern. Daher ist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vorübergehend teils mit einem Überschreiten, teils mit einem Unterschreiten des auf Dauer zu erwartenden Belastungsniveaus der Justiz zu rechnen. Bei der Vorhersage bis zum Jahre 2000 haben die Gutachter folgende möglichen Einflußgrößen berücksichtigt:

- Gesellschaftliche Einflüsse: Zunahme der Komplexität der Lebensbedingungen, veränderte soziale Verhaltensweisen, neue wirtschaftliche Bedingungen, Umfang und Qualität des Verwaltungshandelns, Umfang und Qualität der polizeilichen Strafverfolgung;
- Einflüsse aus dem Rechtssystem: Attraktivität der Gerichte als Entscheidungsinstanz, Verständnis des formellen und materiellen Rechts durch die Bürger, Akzeptanz der Übernahme des westlichen Rechts, Arbeitskapazität der Staatsanwaltschaften, Unterschiede zwischen alten und neuen Ländern in den strafrechtlichen Regelungen;

— Einflüsse aus der vorgerichtlichen Filterebene: Verhalten der Bürger im Umgang mit Rechtsfragen, Konfliktberatung (und -regelung) im Vorfeld, Verhalten der Rechtsanwaltschaft, Leistungsfähigkeit und Akzeptanz von verwaltungsrechtlichen Widerspruchsverfahren, Erledigungspraxis der Staatsanwaltschaften, Konfliktregelung durch Täter-Opfer-Ausgleich.

Nach der so erstellten Prognose ist für den Zeitraum bis zum Jahre 2000 in allen Gerichtsbarkeiten mit Ausnahme der Finanzgerichtsbarkeit mit Geschäftsanfallsspitzen zu rechnen, die über dem langfristig erwartbaren Niveau liegen und zeitversetzt eintreten werden. Aus der Sicht des Jahres 1991 war der Gipfel der Belastung bei den Arbeitsgerichten (160 % des auf

Dauer vorherzusagenden Geschäftsanfalls) und den Familiengerichten (130 %) schon für 1992 zu erwarten²⁾, bei den Zivilgerichten (125 %) und den Sozialgerichten (120 %) für das Jahr 1995, bei den Verwaltungsgerichten (180 %) für das Jahr 1997 und in der Strafgerichtsbarkeit (115 %) für das Jahr 2000.

Die Justiz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änder, die auch in dem projektbegleitenden Beirat vertreten waren, haben den Untersuchungsbericht unmittelbar nach seiner Fertigstellung erhalten.

²⁾ Die vorhergesagte frühe Spitzenbelastung in der Arbeitsgerichtsbarkeit ist tatsächlich eingetreten, während der Geschäftsanfall in der Familiengerichtsbarkeit noch langsam wächst.

Nummer 42

Unterstützung der neuen Bundesländer durch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bei der Textfeststellung und Bereinigung des als Landesrecht fortgeltenden Rechts der ehemaligen DDR

Die Textfeststellung und Bereinigung des als Landesrecht fortgeltenden Rechts der ehemaligen DDR erledigen die neuen Bundesländer. Sie beabsichtigen, diese Arbeit Ende 1994 abzuschließen.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at die neuen Länder bei diesem Vorhaben unterstützt, indem es ihnen alle innerstaatlichen Vorschriften geliefert hat, die im Gesetzblatt, in Gesetzblatt-Sonderdrucken, im Ministerialblatt und im Zentralblatt der ehemaligen DDR veröffentlicht worden sind und am 2. Oktober 1990 noch nicht formal außer Kraft gesetzt waren. Nicht aufgenommen wurden völkerrechtliche Verträge, die zu ihrer Inkraftsetzung ergangenen Vorschriften, reine Preisvorschriften sowie reine Aufhebungsvorschriften.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at diese formal noch nicht außer Kraft gesetzten rund 3 000 Vorschriften in einem Fundstellennachweis „Recht der ehemaligen DDR am 2. Oktober 1990, chronologisch und systematisch geordnet“ herausgegeben. Dieser Fundstellennachweis ist die Grundlage für die Textfeststellung und Rechtsbereinigung der neuen Länder.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die Arbeiten der Länder weiterhin wie folgt unterstützen:

Es wird die Arbeitsergebnisse der Länder in eine Datenbank aufnehmen, die detaillierte Abfragen über

den Stand und die Ergebnisse der Arbeit der neuen Länder für die rund 3 000 Vorschriften erlauben, die am 2. Oktober 1990 noch nicht formal außer Kraft gesetzt waren. Es wird ferner den Nachweis führen, daß alle weiteren rund 12 000 Vorschriften der ehemaligen DDR, die nicht in den Fundstellennachweis aufgenommen wurden, vor dem 2. Oktober 1990 formal außer Kraft gesetzt waren. Sofern einige Vorschriften in den Fundstellennachweis nicht aufgenommen sein sollten, die bei der noch vorzunehmenden weiteren Prüfung am 2. Oktober 1990 noch nicht formal außer Kraft gesetzt waren, wird es diese Vorschriften den neuen Ländern gesondert mitteilen. Die neuen Länder benötigen diese Informationen für ihre Arbeit und ihre künftig noch zu erlassenden Gesetze zur Sammlung und zum Abschluß der Sammlung der als Landesrecht fortgeltenden Vorschriften der ehemaligen DDR.

Das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wird deshalb auch die weiteren rund 12 000 Vorschriften der ehemaligen DDR aus den zuvor aufgeführten Veröffentlichungsblättern in eine Datenbank aufnehmen, die detaillierte Abfragen über die eventuelle Fortgeltung oder das Außerkrafttreten der Vorschriften erlaubt.

Nummer 43

Entwicklung und Stand des Landesbeamtenrecht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 Brandenburg

I. Gesetze

1. Gesetz zur vorläufigen Regelung des Beamtenrechts im Land Brandenburg vom 8. August 1991 (GVBl. S. 372) — in Kraft getreten am 31. August 1991; außer Kraft getreten am 31. Dezember 1992 mit Ausnahme von § 3 Abs. 1, Satz 1, Abs. 4 bis 6
2. Besoldungsgesetz für das Land Brandenburg (Brandenburgisches Besoldungsgesetz — BbgBesG) vom 4. März 1992 (GVBl. Teil I S. 103) — in Kraft seit dem 1. Januar 1992
3. Beamtengesetz für das Land Brandenburg (Landesbeamtengesetz — LBG) vom 24. Dezember 1992 (GVBl. Teil I S. 506) — in Kraft seit dem 1. Januar 1993

II. Verordnungen

1. Verordnung des Landes Brandenbur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vom 10. Juni 1991 (GVBl. S. 227) — in Kraft seit dem 12. Juli 1991
2. Verordnung über die Bewährungsanforderungen für die Einstellung von Bewerbern aus dem Beitrittsgebiet in ein Beamtenverhältnis (Bewährungsanforderungsverordnung — Bewährungs-anfVO) vom 20. August 1991 (GVBl. S. 378) — in Kraft seit dem 31. August 1991
3. Verordnung über den Zeitpunkt der Ernennung von Beamten in den kreisangehörigen Gemeinden des Landes Brandenburg vom 13. Dezember 1991 (GVBl. S. 652) — in Kraft seit dem 24. Dezember 1991; außer Kraft getreten am 27. Juni 1992 (s. 2. VO)
4. Verordnung zur Übertragung besoldungsrechtlicher Zuständigkeiten im Land Brandenburg (Besoldungszuständigkeitsverordnung — Bes-ZustVO) vom 20. Januar 1992 (GVBl. Teil II, S. 31) — in Kraft seit dem 1. Februar 1992
5. Verordnung über die Einstufung der kommunalen Wahlbeamten auf Zeit durch die Gemeinden, Ämter und Landkreise des Landes Brandenburg vom 3. Februar 1992 (GVBl. Teil II S. 76) — in Kraft seit dem 6. März 1992

6. Zweite Verordnung über den Zeitpunkt der Ernennung von Beamten in den kreisangehörigen Gemeinden des Landes Brandenburg vom 17. Juni 1992 (GVBl. Teil II S. 256) — in Kraft seit dem 27. Juni 1992
7. Verordnung über die Ernennung und Entlassung der Beamten des Landes Brandenburg vom 27. August 1992 (GVBl. Teil II S. 526) — in Kraft seit dem 29. August 1992
8. Verordnung über die Ernennung und Entlassung der Beamten im Geschäftsbereich des Ministeriums der Finanzen des Landes Brandenburg vom 2. September 1992 (GVBl. Teil II S. 555) — in Kraft seit dem 17. September 1992
9. Verordnung über die Ernennung und Entlassung der Beamten im Geschäftsbereich des Ministeriums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des Landes Brandenburg vom 10. November 1992 (GVBl. Teil II S. 788) — in Kraft seit dem 31. Dezember 1992
10. Ers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des Landes Brandenbur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vom 22. Dezember 1992 (GVBl. Teil II S. 790) — in Kraft seit dem 31. Dezember 1992

B. Mecklenburg-Vorpommern

I. Gesetze

1. Erstes Gesetz zur Regelung des Beamtenrechts im Land Mecklenburg-Vorpommern (— Erstes Beamtenrechtsregelungsgesetz —) vom 18. Juli 1991 (GVOBl. 1991 S. 242)
2. Zweites Gesetz zur Regelung des Beamtenrechts in Mecklenburg-Vorpommern (— Zweites Beamtenrechtsregelungsgesetz —) vom 24. März 1992 (GVOBl. 1992 S. 210)
3. Gesetz über die Juristenausbildung im Land Mecklenburg-Vorpommern (— Juristenausbildungsgesetz — JAG M-V —) vom 16. Dezember 1992 (GVOBl. 1992 S. 725)
4. Gesetz zur Verlängerung der Geltungsdauer des 1. und 2. Beamtenrechtsregelungsgesetzes vom 16. Dezember 1992 (GVOBl. 1992 S. 717)

II. Verordnungen

1. Landesverordnung über die hauptamtlichen Wahlbeamten auf Zeit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Mecklenburg-Vorpommern (— Kommunalbesoldungsverordnung — KomBesVO —) vom 9. Juli 1991 (GVOBl. 1991 S. 224)
2.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von Lehrern für die öffentlichen Schulen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 Lehrausbildungsverordnung — LAVO —) vom 9. Juli 1991 (GVOBl. 1991 S. 317)
3. Landesverordnun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 LVO-Aufstieg —) vom 15. Juli 1991 (GVOBl. 1991 S. 255)
4. Landesverordnung über Bewährungsanforderungen für die Ernennung zum Beamten auf Probe (— Bewährungsanforderungsverordnung Mecklenburg-Vorpommern —) vom 19. November 1991 (GVOBl. 1991 S. 444)
5. Landesverordnung über Stellenobergrenzen für Beamte auf Lebenszeit der Gemeinden, Landkreise, Verwaltungsgemeinschaften/Verwaltungsämter und Ämter (— Stellenobergrenzenverordnung für Kommunalbeamte — KomStOVO —) vom 27. November 1991 (GVOBl. 1991 S. 446)
6. Vorläufige Ordnung des Vorbereitungsdienstes und der Zweiten Staatsprüfung für Lehrämter an den Schulen im Lande Mecklenburg-Vorpommern (— VOVOP —) vom 16. Januar 1992 (GVOBl. 1992 S. 67)
7. Landesverordnun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Polizeivollzugs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 PLLVO-Aufstieg —) vom 12. März 1992 (GVOBl. 1992 S. 204)
— Änderungsverordnung vom 16. Dezember 1992 (GVOBl. 1992 S. 753)
8. Landesverordnung zur Änderung der Landesverordnun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vom 13. März 1992 (GVOBl. 1992 S. 205)
— Änderungsverordnung vom 16. Dezember 1992 (GVOBl. 1992 S. 754)
9. Vorläufige Prüfungsordnung für die Laufbahn des gehobenen Forstdienstes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vom 15. September 1992 (GVOBl. 1992 S. 608)

*C. Sachsen**I. Gesetze*

1. Gesetz zur Errichtung eines Landespersonalaussschusses vom 4. Juli 1991 (SächsGVBl. S. 225) — in Kraft seit dem 10. Juli 1991
2. Sächsisches Besoldungsgesetz vom 5. Dezember 1992 (SächsGVBl. S. 49) — in Kraft seit dem 1. Juli 1991
3. Gesetz zur vorläufigen Regelung des Beamtenrechts der kommunalen Wahlbeamten und der kommunalen Beamten im Freistaat Sachsen vom 31. Juli 1992 (SächsGVBl. S. 369) — in Kraft seit dem 15. September 1992
4. Beamtengesetz für den Freistaat Sachsen vom 17. Dezember 1992 (SächsGVBl. S. 615) — in Kraft seit dem 31. Dezember 1992

II. Verordnungen

1. Anordnung des Ministerpräsidenten über die Ernennung der Beamten des Freistaates Sachsen vom 24. Oktober 1992 (SächsGVBl. S. 381) — in Kraft seit dem 23. November 1991
2. Verordnung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vom 18. Februar 1992 (SächsGVBl. S. 58) — in Kraft seit dem 1. März 1992
3. Vorläufige Verordnung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über die Besoldung der kommunalen Wahlbeamten vom 11. September 1992 (SächsGVBl. S. 443) — in Kraft seit dem 29. September 1992
4. Verordnung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über die vorläufige Bestimmung und Anwendung von Stellenobergrenzen für kommunale Laufbahnbeamte vom 11. September 1992 (SächsGVBl. S. 444) — in Kraft seit dem 29. September 1992
5. Verordnung des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des Innern über die vorläufige Regelung der Dienstaufwandsentschädigungen für Landräte, hauptamtliche Bürgermeister und hauptamtliche Beigeordnete vom 15. September 1992 (SächsGVBl. S. 447) — in Kraft seit dem 1. Oktober 1992

6. Verordnung des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des Innern über die vorläufige Regelung der Aufwandsentschädigung für die ehrenamtlichen Bürgermeister und ehrenamtlichen Beigeordneten vom 15. September 1992 (SächsGVBl. S. 448) — in Kraft seit dem 1. Oktober 1992
7. Verordnung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über die Arbeitszeit der Beamten des Freistaates Sachsen vom 12. Januar 1993 (SächsGVBl. S. 75) — in Kraft seit dem 11. Februar 1993
8. Verordnung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und Richterinnen vom 1. Februar 1992 (SächsGVBl. S. 121) — in Kraft seit dem 26. Februar 1993
9. Verordnung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über den Urlaub der Beamten und Richter im Freistaat Sachsen vom 1. Februar 1993 (SächsGVBl. S. 123) — in Kraft seit dem 26. Februar 1993
10. Verordnung der Sächsischen Staatsregierung über den Erziehungsurlaub der Beamten und Richter im Freistaat Sachsen vom 16. März 1993 (SächsGVBl. S. 241) — in Kraft seit dem 27. März 1993

D. Sachsen-Anhalt

I. Gesetze

1. Beamtengesetz Sachsen-Anhalt (BG LSA) vom 14. Mai 1991 — GVBl. LSA Nr. 8/91 S. 61 —
2. Besoldungsgesetz für das Land Sachsen-Anhalt (LBesG) vom 27. Juni 1991 — GVBl. LSA Nr. 14/91 S. 123 —
3. Gesetz über die Altersgrenze in Ämtern der Rechtspflege des Landes Sachsen-Anhalt vom 31. Juli 1991 — GVBl. LSA Nr. 20/91 S. 224 —
4. Gesetz zur Änderung der Kommunalverfassung vom 23. August 1991 (vorwiegend dienstrechtliche Ergänzungen) — GVBl. LSA Nr. 24/91 S. 286 —
5. Landespersonalvertretungsgesetz Sachsen-Anhalt (PersVG LSA) vom 10. Februar 1993 — GVBl. LSA Nr. 6/93 S. 56 —

II. Verordnungen

1. Verordnung zur Gestaltung der Laufbahnen im Land Sachsen-Anhalt (GestVO LSA) vom 15. Mai 1991 — GVBl. LSA Nr. 9/91 S. 83 —
2. Verordnung über die Bewährungsanforderungen für die Einstellung von Bewerbern aus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m Sinne der Anlage I Kapi-

tel XIX Sachgebiet A Abschnitt III Nr. 2 Buchstabe c des Einigungsvertrages in ein Beamtenverhältnis im Land Sachsen-Anhalt (BewährungsVO LSA) vom 31. Juli 1991 — GVBl. LSA Nr. 20/91 S. 226 —

3. Kommunalbesoldungsverordnung für das Land Sachsen-Anhalt vom 31. September 1991 — GVBl. Nr. 31/91 S. 352 —
4. Verordnung über die Aufstellung und Ausführung des Haushaltsplanes der Gemeinden im Land Sachsen-Anhalt (Gemeindehaushaltsverordnung-GemHVO) vom 22. Oktober 1991 — GVBl. LSA Nr. 34/91 S. 378 —
5. Verordnung über die Arbeitszeit der Lehrkräfte an öffentlichen Schulen (ArbZVO-Lehr) vom 18. Februar 1992 — GVBl. LSA Nr. 8/92 S. 128 —
6.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der Beamten des höheren Forstdienstes im Land Sachsen-Anhalt (APVOhöHForstD LSA) vom 4. Mai 1992 — GVBl. LSA Nr. 17/92 S. 310 —
7.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der Beamten des gehobenen Forstdienstes im Land Sachsen-Anhalt (APVOgehForstD LSA) vom 4. Mai 1992 — GVBl. LSA Nr. 17/92 S. 312 —
8. Verordnung über die Arbeitszeit der Beamten (ArbZVO) vom 7. Mai 1992 — GVBl. LSA Nr. 18/92 S. 61 —
9. Verordnung über die Ersten Staatsprüfungen für Lehrämter im Land Sachsen-Anhalt vom 14. Juni 1992 — GVBl. LSA Nr. 26/92 S. 488 —
10. Verordnung über die Zweiten Staatsprüfungen für Lehrämter im Land Sachsen-Anhalt vom 19. Juni 1992 — GVBl. LSA Nr. 26/92 S. 557 —
11. Kommunalstellenobergrenzenordnung (KomStOVO) vom 27. Juli 1992 — GVBl. LSA Nr. 32/92 S. 635 —
12. Verordnung über die Laufbahnen des Schul- und Schulaufsichtsdienstes des Landes Sachsen-Anhalt (SchulLV LSA) vom 20. September 1992 — GVBl. LSA Nr. 39/92 S. 698 —
13. Verordnung über die Laufbahn des Polizeivollzugsdienstes des Landes Sachsen-Anhalt (PolLV LSA) vom 2. Dezember 1992 — GVBl. LSA Nr. 48/92 S. 811 —
14.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der Beamten für die Laufbahn des höheren Veterinärdienstes im Land Sachsen-Anhalt (APVOhöHVetD) vom 29. Januar 1993 — GVBl. LSA Nr. 3/93 S. 10 —
15.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der Beamten in den Laufbahnen des feuerwehrtechnischen Dienstes (APVO-Fw) vom 3. Februar 1993 — GVBl. LSA Nr. 5/93 S. 42 —

16. Ausbildungs- und Prüfungsordnung für Gerichtsvollzieher im Land Sachsen-Anhalt vom 10. Februar 1993
— GVBl. LSA Nr. 7/93 S. 79 —
17.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der Beamten für die Laufbahn des höheren Dienstes a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des Landes Sachsen-Anhalt (APVOhöhbibID) vom 28. Februar 1993
— GVBl. LSA Nr. 15/93 —
18.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für die Laufbahnen des gehobenen vermessungstechnischen und des gehobenen kartographischen Verwaltungsdienstes im Land Sachsen-Anhalt (APVOgehvkD LSA) vom 22. März 1993
— GVBl. LSA Nr. 14/93 S. 153 —

E. Thüringen

I. Gesetze

Gesetz zur vorläufigen Regelung des Beamtenrechts des Landes Thüringen (Beamtenrechtliches Vorschaltgesetz — BeamtVorschaltG) vom 17. Juli 1991 (GVBl. S. 217) — in Kraft seit dem 23. Juli 1991

II. Verordnungen

1. Thüringer Verordnun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im Land Thüringen vom 22. Oktober 1991 (GVBl. S. 587) — in Kraft seit dem 15. November 1991
— Geltungsdauer verlängert bis 31. Dezember 1993 durch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Thüringer Verordnung über den erleichterten Aufstieg von Beamten in die nächsthöhere Laufbahn im Land Thüringen vom 4. Dezember 1992 (GVBl. S. 593) — in Kraft seit dem 23. Dezember 1992
2. Thüringer Verordnung über die Bewährungsanforderungen für die Einstellung von Beamten aus dem Beitrittsgebiet in ein Beamtenverhältnis (Thüringer Bewährungsanforderungsverordnung) vom 2. Februar 1993 (GVBl. S. 173) — in Kraft seit dem 10. März 1993

F. Berlin (Ostteil)

Drittes Gesetz über die Vereinheitlichung des Berliner Landesrechts vom 19. Dezember 1991, GVBl. S. 294 (Erstreckung des Landesbeamtenrechts auf den Ostteil Berlins mit Maßgaben; Übergangsregelungen für die Berufung in das Beamtenverhältnis auf Probe im Hinblick auf die Bewährungsanforderungen)

Nummer 44

Stand der Beamtenernenn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zum 1. Januar 1992 und zum 1. Januar 1993

	1. Januar 1992	1. Januar 1993
A) Brandenburg	2 457	7 467
B) Mecklenburg-Vorpommern	5 308	6 042
C) Sachsen	2 495	16 100
D) Sachsen-Anhalt	9 916	13 889
E) Thüringen	ca. 4 000	9 952
F) Berlin (Ostteil)	275	4 349
Zusammen	24 451	57 799

*) Aus dem kommunalen Bereich liegen hinreichende Zahlenangaben z. Z. nicht vor.

Nummer 45

Einsatz von Bundesbediensteten im Rahmen der personellen Hilfe für die Verwaltungen in den neuen Ländern

— Merkblatt —
(Stand 15. Februar 1993)

Der Auf- und Ausbau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rfordert die engagierte Mitarbeit von Angehöri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aus dem bisherigen Bundesgebiet. Für einen solchen — vorübergehenden oder dauernden — Einsatz gelten die nachstehenden dienstrechtlichen Rahmenbedingungen.

1. Beamte

1.1 Abordnung

Bei nur vorübergehender Tätigkeit bei einem Dienstherrn im Bereich der neuen Länder kommt eine Abordnung durch den bisherigen Dienstherrn in Betracht.

a) Besoldung und sonstige Leistungen

- Der abordnende Dienstherr zahlt die Dienstbezüge weiter.
- Hinzu kommt bei einer Abordnung innerhalb der Bundesverwaltung oder zu einer Landesverwaltung z. Z. eine steuerfreie *Aufwandsentschädigung*.

Sie beträgt bei Abordnungen ab 1. Januar 1993

Bes.Gr. A 1—A 9	1 100,— DM
Bes.Gr. A 10	1 200,— DM
Bes.Gr. A 11	1 300,— DM
Bes.Gr. A 12	1 400,— DM
Bes.Gr. A 13 und höher sowie BesO B, C u. R	1 500,— DM

Das Nähere ist in dem Rundschreiben des BMI vom 26. November 1992 geregelt.

Bei Abordnungen zu kommunalen Dienstherrn werden Aufwandsentschädigungen in entsprechender Höhe, die die Kommunen gewähren, über den Personalkostenzuschuß vom Bund erstattet (s. u. Nr. 5).

- Bonus bei der ruhegehaltfähigen Dienstzeit: Die Zeit der Verwendung im Beitrittsgebiet wird doppelt als ruhegehaltfähige Dienstzeit

berücksichtigt, wenn sie mindestens ein Jahr gedauert hat und die Tätigkeit bis zum 31. Dezember 1994 begonnen wird.

b) Reisekosten, Trennungsgeld

Es gelten die bestehenden Vorschriften des Bundes zum Reisekosten- und Trennungsgeldrecht:

- Bei täglicher Rückkehr zum Wohnort werden als Trennungsgeld die Fahrkosten erstattet, bzw. Wegstrecken- oder Mitnahmeentschädigung gewährt. Bei notwendiger Abwesenheit von der Wohnung von mehr als 11 Stunden wird zusätzlich ein Verpflegungszuschuß von 4,— DM je Arbeitstag gewährt.
- Ansonsten wird Trennungsreise- bzw. Trennungstagegeld einschl. Reisebeihilfe für Heimfahrten gewährt; seit 1. April 1991 (zunächst befristet bis 31. Dezember 1993): Reisebeihilfen für *wöchentliche Heimfahrten* bei freier Wahl des Beförderungsmittels (§ 5a Trennungsgeldverordnung).

c) Bonus für Beförderungen

Eine *schnellere Beförderung* kann aufgrund einer längerdauernden erfolgreichen Tätigkeit in den neuen Ländern unter Wahrung des Leistungsprinzips gerechtfertigt sein. Die gezeigte Einsatzbereitschaft ist als Vorteil gegenüber Mitbewerbern mit gleicher Eignung zu werten.

1.2 Versetzung

Bei auf Dauer angelegter Tätigkeit bei einer Behörde im Gebiet der neuen Länder kommt die Versetzung in Betracht. Die Versetzung kann auch unter gleichzeitiger Zusicherung der Rückübernahme erfolgen; die Erteilung einer solchen Zusicherung steht im pflichtgemäßen Ermessen des abgebenden Dienstvorgesetzten.

a) Besoldung und sonstige Leistungen

- Der Rechtsstand bleibt in vollem Umfang gewahrt. Die Zweite Besoldungs-Übergangsverordnung bestimmt, daß *versetzte Beamte* weiterhin *volle Besoldung* nach dem Bundesbesoldungsgesetz erhalten; bei Beförderung stehen ihnen *unverkürzt die Bezüge aus dem Beförderungssamt* zu.

- Die Weitergewährung einer Verwendungszulage nach § 42 Abs. 3 Satz 2 BBesG ist für Neufälle ab 1. Januar 1993 nur noch für die Dauer der Abordnung und nicht mehr bei Versetzung möglich.
- Die Regelung über die *Aufwandsentschädigung* gilt auch für Versetzungen innerhalb der Bundesverwaltung; außerhalb der Bundesverwaltung: (s. u. Nr. 5).
- Auch für den Fall der Versetzung bestimmt die Beamtenversorgungs-Übergangsverordnung, daß die Zeit der Verwendung im Beitrittsgebiet doppelt als ruhegehaltfähige Dienstzeit berücksichtigt wird, wenn sie ununterbrochen mindestens ein Jahr gedauert hat und Tätigkeit frühestens 31. Dezember 1994 begonnen wird.

b) Reisekosten, Trennungsgeld

Soweit die bundesrechtlichen Vorschriften nach den Bestimmungen des Einigungsvertrages auch als Landesrecht in den fünf neuen Ländern anwendbar sind, gelten die oben dargestellten Bedingungen entsprechend (s. Nr. 1.1 b).

Kann nach Zusage der Umzugskostenvergütung wegen Wohnungsmangels oder persönlicher Hinderungsgründe nicht umgezogen werden, wird nach der Trennungsgeldverordnung für diese Zeit Trennungsgeld einschließlich Reisebeihilfe für Heimfahrten gewährt. Wird die Zusage der Umzugskostenvergütung nicht erteilt, werden diese Leistungen ohne zeitliche Begrenzung erbracht.

c) Bonus für Beförderungen

Die Ausführungen unter Nr. 1.1 Buchstabe c gelten entsprechend.

d) Aufstieg

Die neuen Länder haben für ihren Bereich erleichterte Regelungen über den Aufstieg eingeführt (verkürzte Einführungszeit, Befähigungsfeststellung nicht durch Landespersonalausschuß, sondern durch oberste Dienstbehörde).

2. Arbeitnehmer

Für die Abordnung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des öffentlichen Dienstes gelten die obigen Ausführungen grundsätzlich entsprechend. Dies betrifft insbesondere die *Rechtsstandswahrung* bei der Vergütung sowie die oben dargestellten Regelungen über die *Aufwandsentschädigung* und die *reise- und trennungsgeldrechtlichen Leistungen*.

Bei *Versetzungen* sind diesbezüglich Regelungen mit dem neuen Arbeitgeber zu vereinbaren.

3. Pensionäre

- In Betracht kommt die Verwendung im Rahmen von *Anstellungs- oder Beraterverträgen*.
- Die Regelungen über die *Aufwandsentschädigung* sind unmittelbar anwendbar im Rahmen der Beraterverträge mit dem Bund, im übrigen (mittelbar) im Rahmen der Personalkostenersatzung an die neuen Länder und den kommunalen Bereich (vgl. unter Nr. 5).
- Eine *Anrechnung des zusätzlichen Einkommens* auf das Ruhegehalt erfolgt, soweit Versorgungsbezüge und Verwendungseinkommen die Höchstgrenze von 130 v. H. der ruhegehaltfähigen Dienstbezüge überschreiten, nach denen sich das Ruhegehalt bemißt. Zeiten als Arbeitnehmer im öffentlichen Dienst werden auf die ruhegehaltfähige Dienstzeit bis zum Höchstsatz von 75 v. H. angerechnet, sofern sie ununterbrochen mindestens ein Jahr gedauert haben. Diese Regelungen gelten für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die vor dem 31. Dezember 1994 begründet werden.

4. Wohnraumbeschaffung

Bei der *Beschaffung und Vermittlung von angemessenem Wohnraum* soll die aufnehmende Dienststelle über den Rahmen dienstrechtlicher Regelungen hinaus Hilfestellung leisten.

5. Personalkostenzuschüsse und anderer Finanzbedarf

a) Personalkostenzuschüsse an Kommunen

Der Bund hat auch im Jahre 1993 Mittel für Personalkostenzuschüsse an Landkreise, kreisfreie Städte und kreisangehörige Gemeinden u. ä. zur Verfügung gestellt. Voraussetzung ist eine Abordnung von wenigstens 6 Monaten, die Versetzung oder eine Neueinstellung von Beamten bzw. Arbeitnehmern sowie Pensionären aus dem bisherigen Bundesgebiet.

Im Rahmen der die Personalkostenzuschüsse regelnden Richtlinie werden den Kommunen die Gehaltsdifferenz, Aufwandsentschädigung, Trennungsgeld, Kosten einer notwendigen privaten Krankenversicherung bei Wegfall der Beihilfe, Zahlung des Arbeitgeberanteils an der Sozialversicherung und weitere Nebenleistungen erstattet.

b) Personalkostenzuschüsse an Länder

Der Bund erstattet den neuen Ländern für in deren Landesverwaltungen versetzte oder neu eingestellte frühere Bundesbedienstete die Gehaltsdifferenz, Aufwandsentschädigung, Trennungsgeld und weitere Nebenleistungen. Bei Abordnungen von Bundesbediensteten trägt der Bund bis Ende 1993 alle Kosten.

6. Verfahren bei Personalhilfe

- a) Für die Personalgewinnung für Kommunen ist eine zentrale Anlaufstelle für Bewerber und personal-suchende Kommunen eingerichtet worden:

Gemeinsame Personalbörse des Bundesministers
des Innern und der Bundesvereinigung der kom-
munalen Spitzenverbände
Bundeshaus Berlin
Bundesallee 216—218
1000 Berlin 15
(Tel.: 0 30-2 14 06-0/2 07/2 08)

- b) Für Bewerbungen bei Stellen in den neuen Län-
dern hat es sich als zweckmäßig erwiesen, sich
unmittelbar bei den Behörden zu bewerben, zu
denen der Interessent strebt. Die neuen Länder
sind insbesondere an Mitarbeitern aus dem bishe-
rigen Bundesgebiet interessiert, die eine Befähig-
ung oder Berufserfahrung haben, die nur dort
erworben werden konnte.

Interessenten können sich unter Angabe konkreter
Einsatzwünsche in Verbindung setzen mit:

Staatskanzlei des Landes Brandenburg
Heinrich-Mann-Allee 107
O-1561 Potsdam

Staatskanzlei des Freistaates Sachsen
Archivstraße 1
O-8060 Dresden

Staatskanzlei des Landes Mecklenburg-Vorpom-
mern
Schloßstraße 2—4
O-2750 Schwerin

Staatskanzlei des Landes Sachsen-Anhalt
Hegelstraße 42
O-3010 Magde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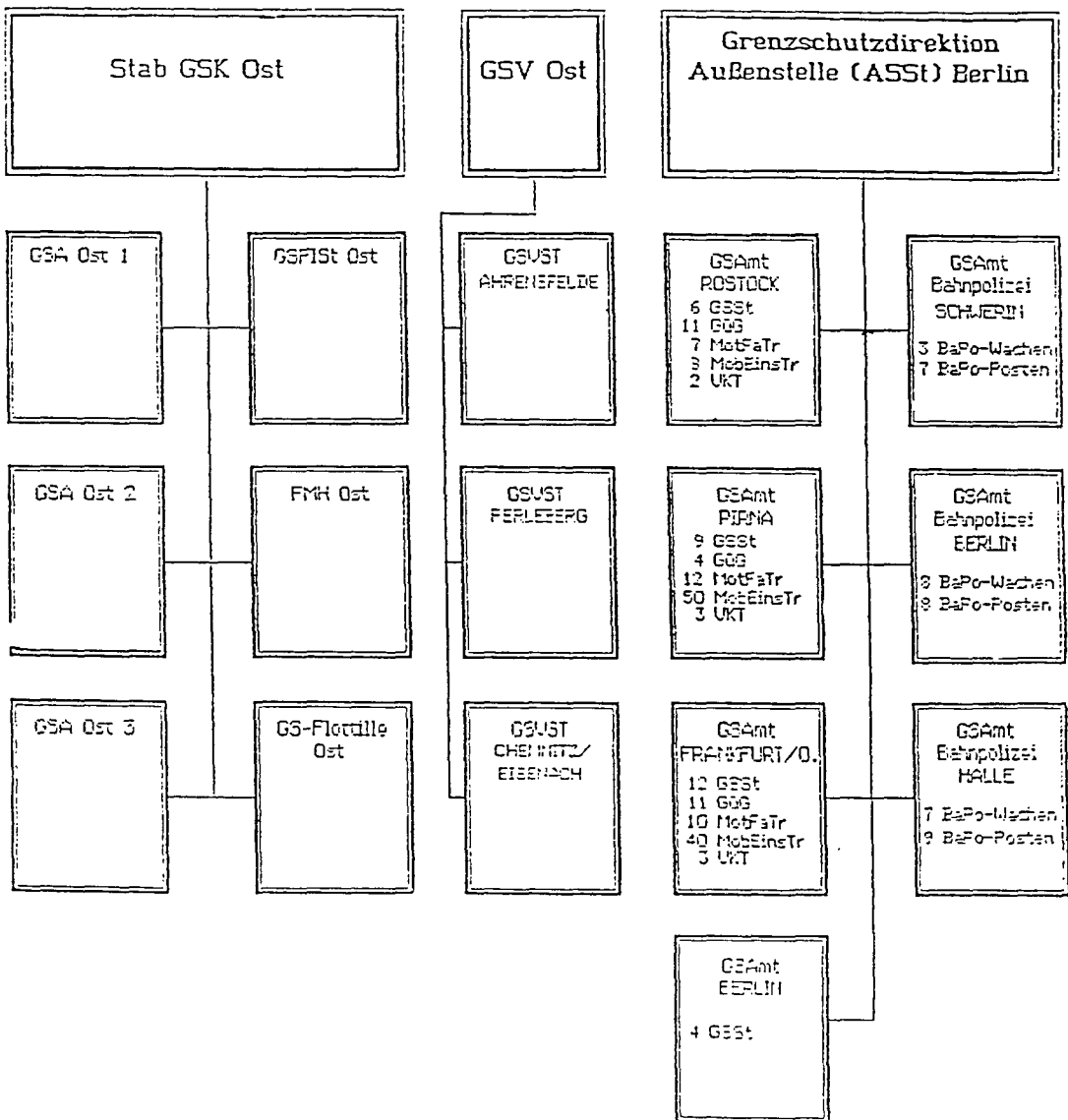
Zentraler Beauftragter für Personalgewinnung
für die Thüringer Landesregierung
Thüringer Innenministerium, Referat 103/3
Schillerstraße 27
O-5085 Erfurt

Nummer 46

Übersicht Bundesgrenzschutz OST
Planstellen (Funktionen) gem. C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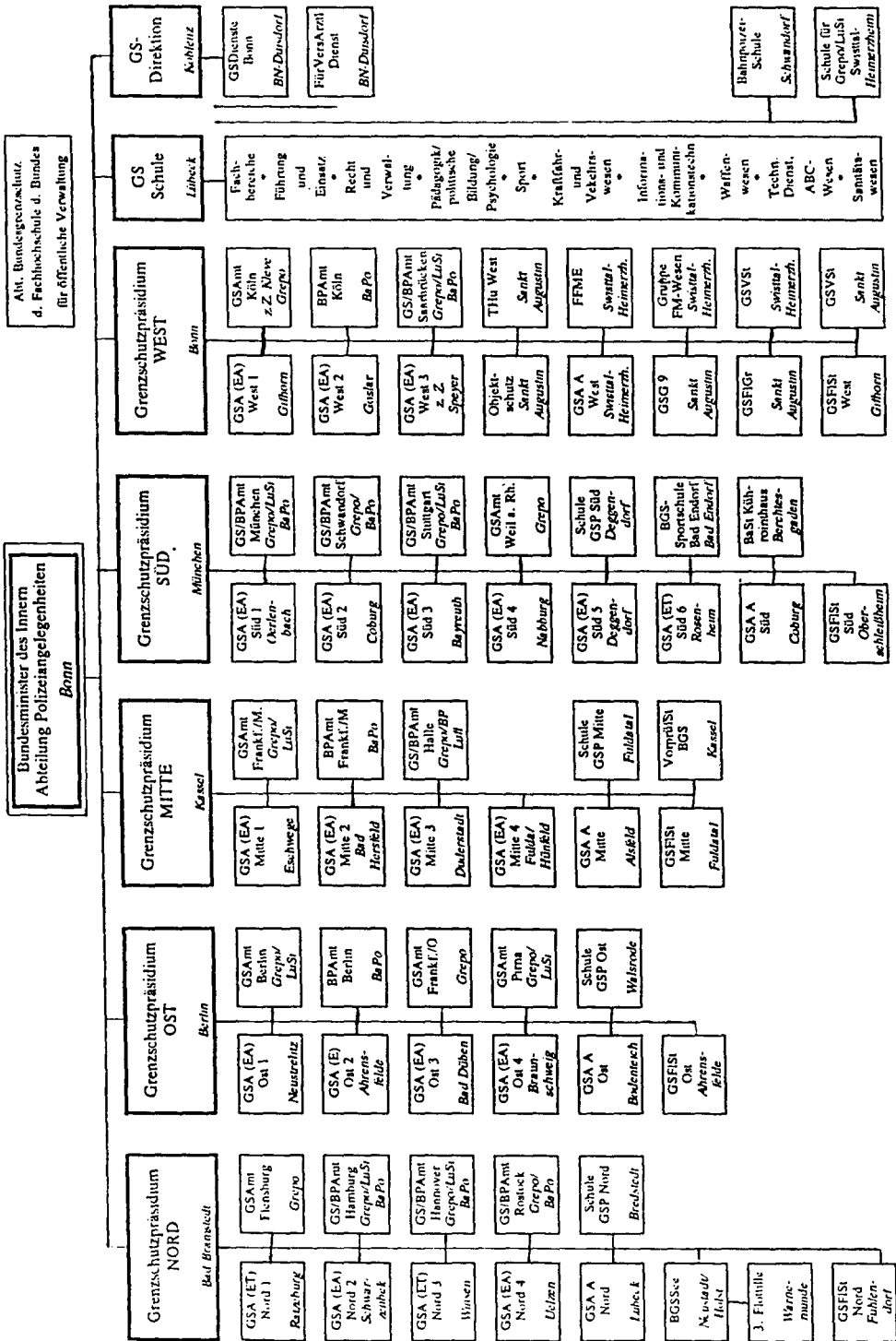
Stand: 1.7.1991

Grenzschutzkommando Ost
Grenzschutzverwaltung Ost
GS-Direktion, ASSt Berlin
GSE (4 GSÄmter)
Bahnpolizei



Nummer 47

WFTABEL_03_XLS/5.8.92



Nummer 48

Der Bundesminister der Justiz
4012/4 — 0 — 25 0007/92

Bonn, den 14. Februar 1992
Hausruf: 4628
zbo-k-180

Referat: R B 2
Referatsleiter: VRiLG Siegismund
Referent: StA Wickern

An den
Herrn Bundeskanzl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undeskanzleramt
5300 Bonn 1

Bericht über Hinrichtungen in der ehemaligen DDR aufgrund von Verurteilungen zur Todesstrafe durch Gerichte der ehemaligen DDR

1. Anlaß des Berichts

Die Press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in der letzten Zeit in verstärktem Umfang über Hinrichtungen in der ehemaligen DDR berichtet. Insbesondere veröffentlichte die Bild-Zeitung bereits am 16. Mai 1990 eine erste Liste mit 58 in der ehemaligen DDR hingerichteten Personen. Auch in der Folgezeit wurde weiter in der Presse über solche Hinrichtungen berichtet. Die Bild-Zeitung vom 10. August 1991 berichtete über den Fund eines Massengrabes, das Urnen von 62 Hingerichteten enthielt. In seiner Ausgabe Nr. 35 vom 26. August 1991 stellte schließlich der SPIEGEL das Thema der Hinrichtungen in der ehemaligen DDR umfassend dar (Anlage 1).

Diese Veröffentlichungen haben Anlaß gegeben, weitergehende Feststellungen zu diesen Hinrichtungen zu treffen und diese in dem vorliegenden Bericht zusammenzufassen.

2. Gegenstand des vorliegenden Berichts

Der vorliegende Bericht betrifft demgemäß — entsprechend dem Auftrag des Herrn Bundeskanzlers — *Hinrichtungen* aufgrund von Verurteilungen zu Todesstrafe durch die Gerichte der ehemaligen DDR, darunter auch 24 Fälle aus den Waldheimer Prozessen (vgl. 6d). Zu weiteren Todesfällen, nämlich

- Hinrichtungen aufgrund von Verurteilungen durch die sowjetischen Militärtribunale auf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 Todesfällen von Inhaftierten;
- Todesfällen an der Berliner Mauer und der inner-deutschen Grenze;
- durch DDR-Organen ohne gerichtliches Verfahren zu Tode gebrachte Personen,

wird voraussichtlich der vom BMFuS angekündigte zweite Teil des von dort in eigener Verantwortung erstellten Berichts (vgl. 3b) nähere Angaben enthalten.

3. Grundlagen dieses Berichts

a) Frühere Erkenntnisse

Hinrichtungen in der DDR sind bereits seit langem bekannt. Beispielsweise haben schon am 4. September 1950 der damalige Bundesminister der Justiz, Dr. Dehler, und der damalige Bundesminister für gesamtdeutsche Fragen, Jakob Kaiser, in einer gemeinsamen Erklärung zu den Waldheimer Prozessen, in denen in 32 Fällen die Todesstrafe verhängt wurde, noch vor der am 4. November 1950 erfolgten Vollstreckung öffentlich Stellung genommen (vgl. Anlage 2).

Auch in der Folgezeit wurde über die Verhängung der Todesstrafe und deren Vollstreckung in der ehemaligen DDR berichtet. In einer Meldung der Süddeutschen Zeitung vom 19. Dezember 1987, die vorrangig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in der ehemaligen DDR betrifft, wurde beispielsweise ausgeführt:

„Die Todesstrafe, deren Abschaffung zusammen mit der unterdessen abgewickelten allgemeinen Amnestie für Straftäter angekündigt worden war, ist schon in den letzten zehn Jahren in der DDR nicht mehr verhängt worden. Insgesamt war sie, vor allem in den ersten Nachkriegsjahren in der Sowjetzone/DDR — soweit bekannt — rund 220mal ausgesprochen und auch vollstreckt worden. Das geschah 122mal wegen nationalsozialistischer Gewaltverbrechen, 77mal wegen Staatsverbrechen (Hochverrat, Sabotage, Spionage, Diversion und Terror), darunter knapp 40mal nach den Streiks und Auf-

ständen des Juni 1953. 22 Todesurteile gab es wegen Mordes . . ." (Anlage 3). [Die Addition ergibt allerdings 221 Einzelfälle.]

b) Grundlagen dieses Berichts

Der Bundesminister für Familie und Senioren, Außenstelle Berlin, ist bereits seit Mai 1990 mit der Erstellung eines Berichts über „Deutsche Opfer der stalinistischen Gewaltherrschaft — Die Toten“ befaßt. Dieser Bericht soll die Grundlage für die Anwendung des Gräbergesetzes auf die Opfer des Stalinismus im Gebiet der ehemaligen DDR sein. Bisher liegen erst eine Vorwegauswertung „Schnellübersicht: Hinrichtungen durch die DDR-Justiz“ (Anlage 4) und der erste Teil des angekündigten Berichts vor (Anlage 5). Der BMFuS hat mitgeteilt, den noch fehlenden Teil, der auch weitere Erkenntnisse zu dem bereits fertiggestellten ersten Teil enthalten soll, bis voraussichtlich Mitte Februar 1992 vorzulegen.

Der vorliegende Bericht beruht auf einer Auswertung der genannten Arbeiten des BMFuS, von Informationen der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Anlagen 6 bis 8), von Berichten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Bayern (Anlage 9), Berlin (Anlage 10), Mecklenburg-Vorpommern (Anlage 11), Niedersachsen (Anlage 12), Sachsen (Anlage 13) und Sachsen-Anhalt (Anlage 14) nebst den jeweils übermittelten Anlagen sowie auf einer Auswertung der durch JURIS dokumentierten Veröffentlichungen in der juristischen Fachliteratur.

Originalvorgänge konnten nur insoweit ausgewertet werden, als sie — beispielsweise den Schreiben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Niedersachsen und Sachsen — als Anlagen beigefügt waren.

c) Derzeitiger Erkenntnisstand

Der derzeitige Erkenntnisstand gibt nur einen Ausschnitt aus dem Gesamtkomplex wieder. Zwischen den bekannt gewordenen Einzelfällen, bei denen eine Hinrichtung der jeweils zu Todesstrafe Verurteilten als gesichert angesehen werden kann, und bekannt gewordenen statistischen Zahlen klaffen zum Teil — insbesondere für die ersten Jahre — deutliche Lücken.

Das vorliegende statistische Material ist unvollständig: Teilweise wird über Verurteilungen zur Todesstrafe berichtet ohne Angabe, ob diese vollstreckt (DDR-Terminus: „verwirklicht“) oder ob die Todesstrafe im Gnadenwege in Freiheitsstrafe umgewandelt wurde — was in etlichen Fällen belegbar ist. Andere Statistiken betreffen nur Einzelfälle, beispielsweise die wegen nationalsozialistischer Gewalttaten Verurteilten (vgl. Anlage 15).

Für andere globale Zahlen, beispielsweise die am 14. Mai 1981 im Generalanzeiger wiedergegebenen, von Amnesty International ermittelten Zahlen (Anlage 16) oder die in der oben zitierten Meldung der Süddeutschen Zeitung (vgl. oben 3. a), S. 3), fehlen

nachvollziehbare Quellenangaben. Darin fehlen insbesondere die letzten Hinrichtungen.

Für den vorliegenden Bericht wurden 157 als gesichert anzusehende Einzelfälle von Vollstreckungen durch einen (aufwendigen) Vergleich der verschiedenen vorliegenden Aufstellungen, Einzelfallmitteilungen und vorhandenen Einzelfall-Dokumente ermittelt (Anlage 23). Dabei muß, obwohl weitere Einzelfälle nicht eindeutig in ihren Einzelheiten aus dem vorhandenen Material ausgesondert werden können, angenommen werden, daß die Zahl der tatsächlichen Fälle wahrscheinlich höher liegt (vgl. 6 a).

4. Rechtsgrundlagen für die Verhängung der Todesstrafe in der ehemaligen DDR

In den Jahren 1968 und 1987 wurde in der DDR das Strafgesetzbuch, soweit es die Todesstrafe betrifft, geändert. In der folgenden Darstellung wird daher von drei verschiedenen Zeitabschnitten zu berichten sein:

a) Zeitraum bis 1968

In der DDR galt zunächst das (Reichs-)Strafgesetzbuch vom 15. Mai 1871, das in mehreren Tatbeständen auch die Todesstrafe vorsah, weiter. Die Bestimmungen über Hoch- und Landesverrat waren durch das Kontrollratsgesetz Nr. 11 vom 30. Januar 1946 aufgehoben worden; sie wurden erst durch das Strafrechtsergänzungsgesetz der DDR vom 11. Dezember 1957 ersetzt. Das DDR-„Gesetz zum Schutze des Friedens“ vom 15. Dezember 1950 sah in einigen besonders schweren Fällen ausdrücklich die Todesstrafe als Strafandrohung vor. Insgesamt sahen in der ehemaligen DDR 33 Straftatbestände zumindest auch die Verhängung der Todesstrafe vor.

Auch Artikel 6 Abs. 2 der DDR-Verfassung vom 7. Oktober 1949 wurde — entsprechend ein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 der DDR vom 4. Oktober 1950 — als eine neben Zuchthaus auch Todesstrafe androhende Strafbestimmung aufgefaßt und zahlreichen Verurteilungen zugrunde gelegt. Dieser Artikel lautete:

„(1) Alle Bürger sind vor dem Gesetz gleichberechtigt.

(2) Boykotttätze gegen demokratische Einrichtungen und Organisationen, Mordtätze gegen demokratische Politiker, Bekundung von Glaubens-, Rassen-, Völkerhaß, militärische Propaganda sowie Kriegstätze und alle sonstigen Handlungen, die sich gegen die Gleichberechtigung richten, sind Verbrechen im Sinne des Strafgesetzbuches. Ausübung demokratischer Rechte im Sinne der Verfassung ist keine Boykotttätze.

(3) . . ." (Anlage 17)

Auf diese Bestimmung wurde in Einzelfällen eine Verurteilung selbst dann gestützt, wenn die Tat auch nach dem besonderen Teil des Strafgesetzbuches strafbar gewesen wäre. So sind beispielsweise die am

6. September 1952 in Dresden hingerichteten Muras und Wilhelm ausweislich des in Ablichtung vorliegenden Urteils wegen Verbrechen nach Artikel 6 der DDR-Verfassung und der Kontrollratsdirektive Nr. 38 verurteilt worden. Tatsächlich war beiden die Tötung eines SED-Funktionärs im Rahmen einer Schlägerei, die sich aus alkoholbedingten verbalen Ausfällen gegen die SED entwickelt hatte, zur Last gelegt worden (vgl. das bei Anlage 12 vorhandene Urteil des Landgerichts in Mühlhausen/Thür. vom 17. Mai 1952, das im Jahr 1991 — einer Pressemeldung (Anlage 30) zufolge — im Wege der Kassation aufgehoben wurde, weil sich die Beweise als manipuliert erwiesen haben).

Schließlich wurden, überwiegend bei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taten, Verurteilungen zu Todesstrafe unmittelbar auf das Kontrollratsgesetz Nummer 10 und die Kontrollratsdirektive Nummer 38 (Anlagen 18) gestützt.

b) Zeitraum ab 1968 bis 1987

Der besondere Teil des ab 1968 geltenden DDR-StGB drohte bei 21 Delikten die Todesstrafe (jeweils alternativ zur Freiheitsstrafe) an. Hier sind beispielsweise zu nennen:

- Planung und Durchführung von Aggressionskriegen;
- besonders schwere Fälle der Durchführung von Aggressionsakten;
-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wenn der Täter hiermit besonders schwere Folgen verursachte;
- unter den gleichen Voraussetzungen der Tatbestand des Kriegsverbrechens;
- besonders schwere Fälle des Hochverrats, der Spionage, des landesverräterischen Treuebruchs, wenn dieser durch Auslieferung oder Verrat geheimzuhaltender Nachrichten begangen wurde;
- besonders schwere Fälle des Terrors, der Diversion (klassenfeindliche [Sabotage-]Tätigkeit, die auf die Schädigung de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insbesondere ihrer Volkswirtschaft oder Verteidigungskraft gerichtet war) und der Sabotage;
- in bestimmten besonderen Fällen der Tötung eines Menschen;
- bei schweren Militärverbrechen, wenn die Tat im Verteidigungsfall begangen wurde.

Bei Jugendlichen, Schwangeren oder Geisteskranken war die Todesstrafe unzulässig (§ 60 Abs. 2 DDR-StGB). Sie durfte im übrigen erst vollstreckt werden, nachdem dem Staatsrat gemäß Artikel 74 Abs. 2 der Verfassung der DDR Gelegenheit gegeben worden war, über ein Gnadengesuch zu entscheiden (§ 348 Abs. 1 DDR-StPO).

c) Zeitraum ab 1987

Mit Wirkung vom 18. Juli 1987 wurde die Todesstrafe zunächst durch Beschluß des Staatsrates (DDR-GBl. I S. 192) und am 30. Dezember 1987 endgültig kraft Gesetzes (DDR-GBl. I S. 301) abgeschafft, nachdem sie bereits seit Mitte 1981 — soweit bisher bekannt — nicht mehr verhängt und vollstreckt worden war.

5. Völkerrechtliche Beurteilung der Todesstrafe und rechtsvergleichende Hinweise

Eine internationale Ächtung der Todesstrafe gab es bis zum Jahre 1983 nicht.

a) Der Internationale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vom 19. Dezember 1966 (BGBl. 1973 II S. 1533) — VN-Ziviltakt —, den die DDR am 8. November 1973 ratifiziert hat, stellt zwar in Artikel 6 Abs. 2 die Verhängung und Vollstreckung von Todesurteilen unter eine Reihe von einschränkenden Voraussetzungen, sagt damit implizit aber auch, daß die Todesstrafe nicht als mit dem Schutz der Menschenrechte, insbesondere dem Recht auf Leben, unvereinbar angesehen wurde.

Das „Zweite Fakultativprotokoll vom 15. Dezember 1989 zum Internationalen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zu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 „Zweites Fakultativprotokoll“ —, durch das (auf Initiative der Bundesrepublik hin) einer gewandelten Rechtsauffassung zur Todesstrafe Rechnung getragen werden soll, hat die DDR am 16. August 1990 ratifiziert; in der Bundesrepublik ist das Ratifizierungsverfahren eingeleitet, aber noch nicht abgeschlossen. Das Protokoll läßt Ausnahmen für Militärdelikte zu; es ist am 11. Juli 1991 in Kraft getreten.

b) Das Protokoll Nr. 6 vom 28. April 1983 zur Konvention zum Schutze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über di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BGBl. 1988 II S. 662) — „Sechstes Zusatzprotokoll“ —, das am 1. März 1985 in Kraft getreten ist und von der Bundesrepublik am 5. Juli 1989 ratifiziert wurde, konnte von der DDR nicht ratifiziert werden; die DDR war nicht Mitglied des Europarats und zählte deshalb nicht zu den Vertragsstaaten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Das Protokoll läßt die Todesstrafe im Kriegsfall zu.

c) Im westlichen Ausland ist die Todesstrafe weitgehend (zumindest de facto; mit wenigen Ausnahmen — insbesondere in den USA) abgeschafft. In Westeuropa erfolgte 1977 die letzte Hinrichtung (in Frankreich). Die Todesstrafe für gewöhnliche Verbrechen gibt es nur noch in Belgien, wo sie im Gnadenwege immer in lebenslange Freiheitsstrafe umgewandelt wird, und in Griechenland, wo seit 1972 ebenfalls regelmäßige Umwandlung erfolgt; in Belgien soll nunmehr die Todesstrafe auch abgeschafft werden. In einigen Staaten (Italien, Spanien, Schweiz, Großbritannien) ist die Todesstrafe noch für militärische Straftaten bzw. Straftaten im Kriege vorgesehen. Die Veränderungen in

Osteuropa haben bisher zu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in Rumänien, der Tschechoslowakei und Ungarn geführt.

Andererseits wird die Todesstrafe auch heute noch bei bestimmten Delikten in 34 Staaten der USA, teils sogar gegen Jugendliche, verhängt. Im Jahre 1987 sind in den USA 25 Menschen hingerichtet worden; etwa 2 000 sitzen derzeit in den Todeszellen (vgl. Anlage 29).

Hervorzuheben ist die weitgehende Abschaffung der Todesstrafe in Lateinamerika, wo die Amerikanische Menschenrechtskonvention von 1969 schon eine über den VN-Zivillpakt hinausgehende Einschränkung der Todesstrafe enthält; ein Protokoll vom 8. Juni 1990 sieht die Abschaffung ähnlich wie in den Zusatzprotokollen zum VN-Zivillpakt und zur EMRK vor.

Nach einer Übersicht von Amnesty International vom September 1991 ist in 44 Ländern die Todesstrafe ganz, in weiteren 16 Ländern für gewöhnliche Straftaten und in 20 Ländern de facto (keine Hinrichtung in den letzten zehn Jahren) abgeschafft. In der Liste werden 96 Staaten genannt, die die Todesstrafe weiterhin anwenden.

- d)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urde die Todesstrafe durch Artikel 102 des Grundgesetzes mit dessen Inkrafttreten am 24. Mai 1949 abgeschafft. Maßgeblich dafür war letztlich der Mißbrauch der Todesstrafe während der NS-Zeit.

Hinsichtlich der Art und Weise der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war die DDR als Vertragsstaat an das Verbot der Folter oder grausamer, unmenschlicher oder erniedrigender Behandlung oder Strafe im Sinne des Artikel 7 des VN-Zivillpakts gebunden. Die in der DDR vorgenommenen Vollstreckungen, die bis 1967 durch den Strang (vgl. S. 15), durch Guillotine und ab 1968 durch Genickschuß erfolgten, dürften, von Besonderheiten im Einzelfall abgesehen, grundsätzlich diesem Verbot nicht unterfallen.

6. Verhängung von Todesurteilen durch Gerichte der DDR

a) Gesamtzahl der Verurteilungen zur Todesstrafe

Die Gesamtzahl der durch Gerichte der DDR in der Zeit von 1949 bis zum Juli 1987 verhängten Todesstrafen kann derzeit nicht zuverlässig angegeben werden. Die in der oben zitierten Zeitungsmeldung der Süddeutschen Zeitung vom 19. Dezember 1987 genannte Zahl von 220 Verurteilungen zur Todesstrafe ist möglich.

Eine von 1945 bis 1975 geführte — in sich rechnerisch nicht stimmige, ungeklärte handschriftliche Ergänzungen enthaltende und mit anderen Quellen nicht zur Deckung zu bringende — 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Anlage 8) verzeichnet 222 verhängte Todesstrafen. Danach wurden 60 dieser Urteile vollstreckt, während in 42 Fällen die Todesstrafe im Gnadenwege in Freiheitsstrafe umge-

wandelt wurde; in 120 Fällen — und damit der Mehrzahl aller Fälle — blieb die Frage der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ungeklärt. Würde man diese Zahlen um 4 in den Jahren 1976 bis 1981 nachweislich vollstreckte Todesurteile ergänzen, so käme man auf 226 Verurteilungen zu Todesstrafe. Diese Zahl darf jedoch wegen der ungesicherten Ausgangsbasis nur als grobe Schätzung mit einer Ungenauigkeit von mindestens 10% verstanden werden.

Die bisher namentlich festgestellten 157 Einzelfälle vollstreckter Todesurteile aus den Jahren 1950 bis 1981 (vgl. 3d letzter Absatz, S. 5) wären andererseits um die Zahl der Hinrichtungen aus den noch unaufgeklärten Jahren 1945 bis 1949 zu ergänzen, in denen lt. einer von einem Mitarbeiter des Generalstaatsanwalts der DDR Anfang 1991 veröffentlichten Statistik (Anlage 15) allein wegen NS-Verbrechen 41 Todesurteile ergangen sein sollen. Auch im übrigen bestehen Anhaltspunkte dafür, daß bisher nicht alle Fälle erfolgter Hinrichtungen bekannt geworden sind.

b) Aufschlüsselung dieser Fälle auf einzelne Deliktsbereiche

Eine exakte Aufschlüsselung auf die hauptsächlichsten Anwendungsbereiche der Todesstrafe, nämlich

-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taten,
- „Staatsverbrechen“ gegen die DDR (Hochverrat, Sabotage, Spionage, Diversion und Terror) und
- allgemeine Schwerstkriminalität (insbesondere Mord)

ist derzeit nicht möglich.

In den festgestellten Einzelfällen bis zum Jahr 1967 liegt der vollstreckten Todesstrafe in den meisten Fällen (vgl. die Liste der Staatsanwaltschaft Dresden über die in Dresden hingerichteten Personen in Anlage 13) ein Verbrechen nach Artikel 6 Abs. 2 der DDR-Verfassung zugrunde, ohne daß sich daraus konkrete Anhaltspunkte auf die einzelnen Deliktsbereiche ziehen lassen. Als Beispiel kann der oben unter 4. a) (S. 7) dargestellte Fall der am 6. September 1952 in Dresden hingerichteten Muras und Wilhelm genannt werden. Die im Einzelfall angewendeten Straftatbestände erscheinen daher zur Abgrenzung der Deliktsbereiche ungeeignet. Im übrigen liegen nur in Ausnahmefällen so konkrete Angaben über die Tat vor, daß diese einem Deliktsbereich hätte zugeordnet werden können.

Der 1991 veröffentlichten Statistik (Anlage 15) zufolge sollen insgesamt 127 Todesurteile wegen NS-Verbrechen ergangen sein, die meisten (49) im Jahr 1950 und das letzte im Jahr 1976.

Die oben (vgl. 6a, S. 11) angesprochene Statistik der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weist darauf hin, daß gut die Hälfte aller Todesurteile wegen NS-Verbrechen, etwa ein Drittel wegen „Staatsverbrechen“ und die verbleibenden gut 10% wegen allgemeiner Kriminalität ergangen sind. Diese Zahlen können wegen der zahlreichen Ungenauig-

keiten des vorhandenen Zahlenmaterials jedoch nicht als gesichert angesehen werden.

c) Begründung der Verhängung der Todesstrafe im Einzelfall

Zur Beurteilung der Frage, ob die in der ehemaligen DDR verhängten Todesurteile unabhängig von grundsätzlichen Bedenken gegen die Todesstrafe rechtsstaatlichen Ansprüchen genügen würden und im allgemeinen angemessen begründet wurden, reicht das vorhandene Material bei weitem nicht aus.

Ebensowenig ist bisher geklärt, ob die Verhängung von Todesstrafen im Einzelfall oder regelmäßig auf politischer Einflußnahme oder Weisung — vgl. hierzu unter 10. — beruhte.

Zur Abfassung der Urteilsgründe kann folgendes angemerkt werden:

Dem BMJ liegen nur aus 4 Strafverfahren die schriftlichen Urteilsgründe in Ablichtung vor (vgl. die in Anlage 19 als Beispiel beigefügten Urteile des Bezirksgerichts Leipzig und des Obersten Gerichts in der Strafsache gegen E. Zahradnik; im übrigen mußte auf die Beifügung der Urteile zu den Anlagen wegen ihres Umfangs verzichtet werden). Drei dieser Urteile zeichnen sich durch detaillierte Feststellungen zum Werdegang der Angeklagten und durch eine erstaunlich ausführliche Begründung der verhängten Strafe aus. Anhaltspunkte dafür, daß die beteiligten Richter oder der Staatsanwalt in diesen Fällen eine Rechtsbeugung begangen haben könnten, sind diesen Urteilen nach wohl zutreffender Auffassung der zuständigen Staatsanwaltschaft Leipzig nicht zu entnehmen.

Inwieweit die in den Urteilsgründen getroffenen Feststellungen zum der Verurteilung zugrundeliegenden Tathergang der Wahrheit entsprachen oder auf manipulierten Beweismitteln, erzwungenen wahrheitswidrigen Geständnissen oder falschen Zeugenaussagen beruhten, kann indes nicht beurteilt werden.

Die Süddeutsche Zeitung berichtete in ihrer Ausgabe vom 21. Januar 1992 (Anlage 30) darüber, daß — im Fall des vierten vorliegenden Urteils — die im Jahre 1952 hingerichteten Muras und Wilhelm (siehe oben unter 4.a), S. 7) unter Verwendung gefälschter Beweismittel verurteilt worden seien und 1991 im Rahmen eines Kassationsverfahrens, das aufgrund von Angaben eines nunmehr aussagebereiten Zeugen eingeleitet worden sei, nachträglich freigesprochen wurden. Dieses Urteil aus dem Jahre 1952 ist durch politische Ausführungen und ein drakonisches Strafmaß geprägt.

d) Exkurs: Die Waldheimer Prozesse

Anfang 1950 löste die sowjetische Militärverwaltung die letzten bis dahin noch bestehenden Internierungslager in Bautzen, Buchenwald und Sachsenhausen auf. Während 649 der Internierten im Gewahrsam sowjetischer Behörden verblieben und 15 038 Gefangene entlassen wurden, wurden 10 513 Gefangene

den DDR-Behörden zur weiteren Verbüßung der von den sowjetischen Militärtribunalen verhängten Strafen und weitere 3 432 Gefangene zur Aburteilung wegen ihrer Tätigkeit während der NS-Zeit übergeben.

Diese 3 432 Personen wurden — soweit sie nicht zuvor verstorben (88), geistesschwach (2) oder wegen infektiöser Erkrankungen verhandlungsunfähig (73) waren — im Sommer 1950 von eigens zu diesem Zweck aus als besonders zuverlässig beurteilten DDR-Richtern gebildeten 20 Strafkammern des LG Chemnitz in überwiegend nichtöffentlichen, regelmäßig nur etwa 20 Minuten dauernden und alle prozessualen Regeln mißachtenden „Hauptverhandlungen“ abgeurteilt. Dabei wurden insgesamt 32 Todesurteile verhängt, von denen 6 später — ob auf Rechtsmittel der Angeklagten oder im Gnadenwege, ist unklar — in lebenslanges Zuchthaus umgewandelt wurden. Zwei weitere dieser Verurteilten starben vor dem Hinrichtungstermin am 4. November 1950, an dem die verbleibenden 24 Personen (von denen bisher 23 namentlich festgestellt werden konnten) durch den Strang getötet wurden. Näheres hierzu kann den vorliegenden Veröffentlichungen entnommen werden (Anlagen 20). Einem inzwischen bekannt gewordenen SED-internen Bericht ist zu entnehmen, daß einige der beteiligten Staatsanwälte und Richter Zweifel an der Richtigkeit der diesen Verurteilungen zugrundeliegenden Protokolle erhoben hatten.

In der Bundesrepublik sind die Waldheimer Urteile von Anfang an als rechtsstaatlichen Ansprüchen nicht genügend und daher nichtig angesehen worden.

Neuesten Pressemeldungen (Anlage 20f) zufolge wurde inzwischen ein erster an diesen Urteilen beteiligter, heute 76 Jahre alter Richter wegen Verdachts der Rechtsbeugung, des Totschlags und des Mordes verhaftet; außerdem wird gegen weitere 10 überlebende, an den Prozessen beteiligte Richter, Staatsanwälte und Schöffen ermittelt.

7. Umwandlung von Todesurteilen in Zuchthausstrafen im Gnadenwege

Bereits den oben unter Nr. 6 wiedergegebenen Zahlen ist zu entnehmen, daß eine gnadenweise Umwandlung von Todesstrafen in lebenslange oder zeitige Zuchthausstrafen in mindestens 42 Fällen, von denen bisher lediglich 6 namentlich bekannt sind, erfolgt ist. Es spricht einiges dafür, daß die tatsächliche Zahl dieser Begnadigungsfälle höher liegt.

8. Vollstreckung von Todesurteilen

a) Ort der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Die von Gerichten der DDR verhängten Todesurteile wurden, soweit bisher bekannt, in einer zentralen Hinrichtungsstelle vollstreckt. Diese Hinrichtungsstätte befand sich

— spätestens ab März 1950 — für den Zeitraum davor liegen bisher keine Erkenntnisse vor — bis Ende

Mai 1952 in der Strafanstalt Frankfurt/Oder, Collegienstraße. Außerdem wurden am 4. November 1952 in Waldheim 24 Hinrichtungen vorgenommen. Hinweise auf weitere Vollstreckungen in der Haftanstalt Torgau fanden bisher keine Bestätigung.

- ab Juni 1952 bis Mitte Januar 1960 in der Untersuchungshaftvollzugsanstalt I in Dresden, Georg-Bär-Straße, und
- ab Juli 1960 bis zur Aufhebung der Todesstrafe im Sommer 1987 in einem verheimlichten Nebentrakt der Strafvollzugsanstalt in Leipzig, Alfred-Kästner-Straße. Soweit bisher bekannt, fand dort die letzte Hinrichtung 1981 statt.

b) Art und Weise des Vollzugs der Todesstrafe

Abgesehen von den 24 am 4. November 1950 in Waldheim durch den Strang vorgenommenen Hinrichtungen wurden bis zum Jahr 1967 alle Hinrichtungen mit einer Guillotine (DDR-Terminus: „Fall-schwertmaschine“) vorgenommen. Der Ablauf der Vollstreckung, die Teilnehmer und die übrigen Einzelheiten waren in einer Dienstanweisung Nr. 44/54 des Chefs der Dt. Volkspolizei (DVP) vom 28. August 1954 und einer Anweisung des stellvertretenden Chefs der DVP vom 11. Oktober 1963 festgelegt. Diese Dokumente liegen dem BMJ nicht vor.

Ab dem 1. Juli 1968 wurden die Vollstreckungen entsprechend einer „Gemeinsamen Anweisung über die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des Ministers des Innern, des Generalstaatsanwalts und des Ministers für Staatssicherheit vom Juni 1968 (Anlage 21) vorgenommen. Danach war die Todesstrafe durch einen unerwarteten Nahschuß in den Hinterkopf vorzunehmen. An der „Durchführung der Vollstreckung“ hatten teilzunehmen:

- der vom Generalstaatsanwalt beauftragte Staatsanwalt,
- der zuständige Arzt, der auch den Tod des Verurteilten festzustellen hatte,
- bei Verfahren, die durch Untersuchungsorgane des MfS bearbeitet worden waren, ggfls. ein Beauftragter des MfS,
- der Leiter der Vollstreckungseinrichtung und
- die mit der Vollstreckung Beauftragten.

c) Der Ablauf des Vollstreckungsverfahrens

Die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setzte nach der genannten Gemeinsamen Anweisung ein rechtskräftiges Urteil eines Gerichts der DDR, eine ablehnende Gnadenentscheidung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s der DDR und das Fehlen bestimmter, die Vollstreckung hindernder Gründe voraus (z. B. Schwangerschaft).

Die Vollstreckung wurde ausgelöst durch ein „Verwirklichungsersuchen“ des verurteilenden Gerichts an den Leiter der Haftanstalt; darin wurde die Rechtskraft des Urteils bescheinigt (Anlage 22a). Anschließend beauftragte (Anlagen 22b) und 27 d) der für die Vollstreckung von Todesurteilen allein zuständige Generalstaatsanwalt den Minister des Innern, der seinerseits gegenüber dem Leiter der Haftanstalt Leipzig schriftlich die Vollstreckung anordnete (Anlage 22c). Dieser stellte das Vollstreckungskommando zusammen. Der Verurteilte wurde in der Regel am frühen Morgen des Hinrichtungstages durch ein Kommando des MfS zum Hinrichtungsort, seit Juli 1960 dem Sondertrakt der Strafvollzugsanstalt Leipzig, gebracht und dort dem Hinrichtungskommando übergeben. Dieses führte den Verurteilten in Anwesenheit der oben genannten Personen in den Hinrichtungsraum. Dort trat von hinten der Vollstreckende an den Verurteilten heran und schoß diesem aus nächster Nähe mit einer Pistole P 38 mit Schalldämpfer in den Hinterkopf.

Danach stellte der anwesende Arzt den Tod des Hingerichteten fest. Darüber wurde ein Vollstreckungsprotokoll erstellt (Anlagen 22d und 27e). In den Totenschein (Anlagen 22e und 27f) wurde als Todesursache entweder „Schädelbasisfraktur“ oder „Herz-Kreislauf-Versagen“ eingetragen. Die standesamtliche Sterbeurkunde (Anlage 22h) wurde in weit entfernten Städten ausgestellt. Der Leichnam wurde zu einem Krematorium gebracht und dort als „Anatomieleiche“ erfaßt. Die Urne mit der Asche wurde in den Jahren bis 1961 auf dem Dresdener Friedhof in einem Sammelgrab beerdigt. Die Asche der in Leipzig Hingerichteten wurde dagegen nicht beerdigt, sondern auf der Wiese eines Friedhofes ausgestreut oder gar mit den Sandvorräten eines Baustoffwerkes vermischt.

d) Zeitpunkt der Vollstreckung

Soweit hierzu Feststellungen möglich sind, fällt auf, daß die Todesstrafe in einigen Fällen bereits wenige Tage nach ihrer Verhängung vollstreckt wurde. So sind der am 3. März 1954 verurteilte P. Rebenstock bereits am 5. März 1954 und der am 7. Dezember 1979 verurteilte G. Trebeljahr bereits am 10. Dezember 1979 hingerichtet worden. In weiteren drei Fällen lassen sich Hinrichtungen innerhalb einer Woche nach dem Urteil, in weiteren 8 Fällen noch innerhalb eines Monats feststellen. Hierzu gehören auch die beiden letzten Hingerichteten, die wegen Spionage verurteilten W. Baumann („Der rote General“) — Hinrichtung nach 9 Tagen am 18. Juli 1980 — und Dr. W. Teske — Hinrichtung 15 Tage nach dem Urteil am 26. Juni 1981.

e) Entwicklung der Zahl der Hingerichteten

In den ersten Jahren nach dem zweiten Weltkrieg hat es zunächst bis zu 29 Hinrichtungen im Jahr (1950) gegeben. Nach einem zweiten Höhepunkt im Jahr 1955 (21 Hingerichtete) sank die Zahl dann über

8 Hingerichtete 1956 auf 0 Hinrichtungen in den Jahren 1957 bis 1959. Ab 1960 schwankte sie bis zum Jahr 1973 zwischen ein bis 6 Hinrichtungen. Danach wurden 1975 noch 2 Menschen und in den Jahren 1976, 1979, 1980 und 1981 je ein Mensch hingerichtet. Seitdem haben sich bis zu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im Juli 1987 keine Hinrichtungen mehr feststellen lassen (vgl. Anlage 23 — Aufstellung der Hinrichtungen).

f) Geschlecht und Altersstruktur der Hingerichteten

Unter den 157 feststellbaren Hingerichteten waren 3 Frauen: E. Dorn am 3. Oktober 1953, S. Krüger — zusammen mit ihrem Ehemann B. Krüger — am 14. September 1955 und E. H. Barczatis am 23. November 1955.

Bei 119 der 157 Hingerichteten hat sich das Alter zum Zeitpunkt der Hinrichtung ermitteln lassen. Der jüngste Hingerichtete (W. Hildach, 15. April 1971) war 19 Jahre 8 Monate, der älteste (P. Feustel, 18. März 1973) 73 Jahre 8 Monate alt. Schwerpunkte liegen in den Altersgruppen der 25 bis unter 30 Jahre alten (24) sowie der 30 bis unter 35 Jahre und der 40 bis unter 45 Jahre alten (jeweils 19) Hingerichteten. Näheres ist der als Anlage 24 beigefügten Aufstellung zu entnehmen.

10. Politische Einflußnahme auf Strafverfahren

Nach dem in der ehemaligen DDR herrschenden Staatsverständnis war die Justiz nicht als unabhängige Staatsgewalt ausgebildet. Vielmehr verstand sie sich als vollziehendes Organ der herrschenden Arbeiterklasse, die von der SED geführt wurde. Dem entsprach es, daß die Führer der SED auf Gerichtsentscheidungen Einfluß nahmen und die Richter ihre Entscheidungen politisch zu rechtfertigen hatten (vgl. die Ausführungen des damaligen DDR-Justizministers Dr. Kurt Wünsche, Anlage 25).

Gerade in Strafverfahren von politischem Gewicht, z. B. wegen Spionage, war es deshalb üblich, daß der vorgesehene Strafantrag des Sitzungsvertreters der Staatsanwaltschaft zunächst dem Zentralkomitee der SED berichtet (vgl. Anlage 27 a) und von diesem genehmigt werden mußte. Die Abteilung „Staatl. Organe“ des SED-Zentralkomitees erarbeitete daraus eine Vorlage für den Staatsratsvorsitzenden, der den Vorschlag genehmigte oder auch abänderte. Auf Todesstrafe lautende Anträge waren (nach Aussage eines früheren Militärstaatsanwalts in einem noch anhängigen Ermittlungsverfahren) zuvor grundsätzlich von dem Staatsratsvorsitzenden zu genehmigen. Dem BMJ liegen zwei derartige Vorlagen vor, in denen W. Ulbricht handschriftlich auf lange Freiheitsstrafe lautende Vorschläge in Todesstrafe abänderte (Anlagen 26). Die von diesen Änderungen betroffenen H.-D. Kogel und J. Wiebach wurden am 21. Juni 1955 bzw. 24. Juni 1955 zur Todesstrafe verurteilt und am 29. Juni 1955 bzw. 14. September 1955 hingerichtet.

11. Besonderheiten

a) Verheimlichung der Hinrichtungen

Entsprechend der gemeinsamen Anweisung vom Juni 1968 (Anlage 21) waren alle an der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Beteiligten zu strengstem Stillschweigen verpflichtet und alle in diesem Zusammenhang zu fertigenden Dokumente als streng geheim zu behandeln. Die Totenscheine ließen die wahre Todesursache nicht erkennen, sondern lauteten auf Schädelbasisbruch oder Herz-Kreislauf-Versagen. Über den Transport des Verurteilten zum Hinrichtungsort waren keine Aufzeichnungen zu fertigen. Auch bei der Einäscherung und der standesamtlichen Registrierung des Todesfalles wurde auf strengste Verschwiegenheit geachtet. Die Vollstreckung der Todesstrafe war dem Verteidiger und den nächsten Angehörigen des Hingerichteten mitzuteilen; eine Mitteilung über den Verbleib der Urne oder deren Herausgabe erfolgte nicht.

Andererseits sind in der juristischen Fachliteratur der DDR im Einzelfall auf Todesstrafe lautende Urteile veröffentlicht worden. Auch soll über einzelne Fälle öffentlich berichtet worden sein. Amtliche Zahlen über Todesurteile oder Hinrichtungen wurden indessen nicht veröffentlicht.

In einem Fall ist bekannt, daß der Hingerichtete (Baumann) ausdrücklich darum gebeten hatte, von einer Benachrichtigung seiner Tochter über die verhängte Todesstrafe abzusehen.

Gründe für die betriebene Geheimhaltung sind nicht bekannt. Hierüber könnte nur spekuliert werden. Die Angabe einer falschen Todesursache in dem Totenschein und die Verschleierung des Todesortes kamen indes — ohne daß dies das maßgebliche Motiv gewesen sein mag — den zu vermutenden Gefühlen der Angehörigen des Hingerichteten entgegen.

b) Manipulierte „Öffentlichkeit“ der Hauptverhandlung

Es liegen Dokumente vor, die belegen, daß die „Öffentlichkeit“ in Strafverfahren aus besonders dafür abkommandierten Polizeiangehörigen oder Betriebsdelegationen bestand. Diese wurden eigens für diesen Zweck angefordert (vgl. Anlagen 20 a), 26).

c) Fehlerhafte Behandlung von Gnadengesuchen?

Die in letzter Zeit durchgeführten Ermittlungen haben ergeben, daß in den Fällen Trebeljahr, Baumann und Dr. Teske Gnadengesuche dem Staatsratsvorsitzenden zumindest nicht auf dem vorgesehenen Dienstweg vorgelegt worden sind (Anlage 28). Derzeit kann indes — ohne daß dafür konkrete Anhaltspunkte vorliegen — nicht ausgeschlossen werden, daß der Minister für Staatssicherheit Mielke die Gnadenanträge dem Staatsratsvorsitzenden Honecker mündlich vorgetragen hat (vgl. Anlage 10).

12. Hinrichtungen als Gegenstand staatsanwaltschaftlicher Ermittlungen

Den vorliegenden Berichten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der Länder Berlin,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und Sachsen-Anhalt ist zu entnehmen, daß sich die staatsanwaltschaftlichen Ermittlungen zunächst darauf beschränkten, zu überprüfen, ob den bekannt gewordenen Hinrichtungen rechtskräftige Todesurteile zugrunde liegen.

Bei der 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 der Staatsanwaltschaft bei dem Kammergericht Berlin (vgl. Anlage 10) werden inzwischen im Zusammenhang mit den Hinrichtungen Trebeljahr, Baumann und Dr. Teske drei Ermittlungsverfahren geführt. Gegenstand der Ermittlungen ist die Frage, ob die Todesurteile mit dem Ergebnis der Hauptverhandlungen vor dem Obersten Gericht der DDR vereinbar waren und ob diesem der wesentliche Tatsachenstoff vollständig unterbreitet worden ist. Dabei geht es auch um einen möglichen Eingriff Mielkes in das Begnadigungsverfahren (siehe oben unter 11c)). Im übrigen sind einzelne einschlägige Ermittlungsverfahren bei den Staatsanwaltschaften Fulda und Dresden anhängig oder zu erwarten (vgl. Anlagen 12, 13). Schließlich sind die Waldheimer Prozesse Gegenstand von Ermittlungen, die vor wenigen Tagen zur Verhaftung eines früheren Richters führten (vgl. Anlage 20f)).

Hinweis: Nachfolgende Anlagen sind nicht abgedruckt

Anlagen

Band 1:

1. Bericht des SPIEGEL vom 26. August 1991
2. Gemeinsame Erklärung des Bundesministers der Justiz, Dr. Thomas Dehler, und des Bundesministers für gesamtdeutsche Fragen, Jakob Kaiser, vom 4. September 1950 zu den Waldheimer Prozessen
3. Meldung der Süddeutschen Zeitung vom 19. Dezember 1987
4. Schnellübersicht des BMFuS
5. Erster Teil des Berichts des BMFuS
6. Schreiben der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vom 22. August 1991
7. Schreiben der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vom 27. August 1991
8. Schreiben der Bundesanstalt für gesamtdeutsche Aufgaben vom 9. September 1991
9. Schreiben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s der Justiz vom 6. September 1991
10. Schreiben der Senatsverwaltung für Justiz des Landes Berlin vom 13. September 1991
11. Schreiben des Ministers für Justiz, Bundes- und Europaangelegenheiten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vom 27. November 1991
12. Schreiben des Niedersächsischen Justizministeriums vom 6. und 12. September 1991
13. Schreiben des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der Justiz vom 22. August 1991 und 1. November 1991
14. Schreiben des Ministeriums der Justiz des Landes Sachsen-Anhalt vom 9. Oktober 1991
15. Aufsatz von Dr. G. Wieland in NJ 1991, S. 49 ff.
16. Ausschnitt aus dem Generalanzeiger vom 14. Mai 1981
17. Artikel 6 der DDR-Verfassung vom 7. Oktober 1949
18. Kontrollratsgesetz Nummer 10 und Kontrollratsdirektive Nummer 38

Band 2:

19. Todesurteile vom 16. September 1971 und 20. Oktober 1971 in der Strafsache gegen E. Zahradnik
20. Veröffentlichungen zu den Waldheimer Prozessen:
 - a) Fricke, Deutschland-Archiv 1980, S. 1172 ff.;
 - b) Fricke, NJ 1991, S. 209 f.;
 - c) Beckert, NJ 1991, S. 301 f.;
 - d) Otto, NJ 1991, S. 355 ff.;
 - e) Archivmaterial in NJ 1991, S. 392 ff.;
 - f) Pressemeldungen aus der Süddt. Zeitung vom 16./17. und 21. Januar 1992
21. Gemeinsame Anweisung über die Vollstreckung von Todesurteilen vom Juni 1968
22. Muster für einzelne Vollstreckungsdokumente: (soweit nicht anders angegeben, den Fall Dr. Teske betreffend)
 - a) 1. Seite des Todesurteils und Verwirklichungsersuchen
 - b) Vollstreckungsauftrag des DDR-GStA
 - c) Vollstreckungsanordnung des Mdl
 - d) Vollstreckungsprotokoll
 - e) Totenschein (betr. Elli Barczatis)
 - f) Übergabe des Totenscheins
 - g) Freigabe zur Feuerbestattung (betr. Elli Barczatis)
 - h) Sterbeurkunde
23. Aufstellung der feststellbaren Hinrichtungen
24. Altersstruktur der Hingerichteten
25. Dr. Kurt Wünsche in NJ 1970, S. 33
26. Vorlagen zur Genehmigung eines vorgesehenen Strafantrages an den SED-Vorsitzenden W. Ulbricht vom 13. und 14. Juni 1955

27. Dokumente zu einem Einzelfall (Fehrmann):

- a) Bericht DDR-GStA an das ZK der SED vom 7. September 1961
- b) Todesurteil (1. Seite)
- c) Ablehnung des Gnadengesuchs
- d) Vollstreckungsauftrag

e) Vollstreckungsprotokoll

f) Totenschein

28. Ermittlungsvermerk des Militär-Oberstaatsanwalts der DDR vom 28. Mai 1990

29. Aufsatz von Wieck in MDR 1990, S. 113ff.

30. Bericht aus der Süddt. Zeitung vom 21. Januar 1992

Nummer 49

Oberstes Geri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Plenum —

Ministerium der Justiz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gaben der Gericht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és der SED

I.

Die Beschlüsse des XI. Parteitagés mit ihren anspruchsvollen Zielen und Wegen zur Fortsetzung der bewährten Innen- und Außenpolitik zum Wohle des Volkes und zur Erhaltung des Friedens sind verbindliche Grundlage für die Tätigkeit aller Gerichte. Sie sind den Richtern, Sekretären und Mitarbeitern der Gerichte, den Schöffen sowie den Mitgliedern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Richtschnur ihres Handelns und Maßstab für die Qualität ihrer Arbeit.

Die Wertschätzung der Arbeit der Justizorgane, die der Parteitag zum Ausdruck brachte, ist für alle Mitarbeiter eine hohe Verpflichtung, die Beschlüsse mit ganzer Kraft und hoher Einsatzbereitschaft umzusetzen. Dabei gibt der Beschluß des Sekretariats des Zentralkomitees vom 24. Oktober 1984 zum Bericht der Kreisleitung der SED Annaberg aktuelle Orientierungen.

Schwerpunkte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sind:

- Unterstützung der außenpolitischen Ziele und Maßnahmen von Partei und Regierung mit den Mitteln des sozialistischen Rechts;
- Maßnahmen zur allseitigen Stärkung der Arbeiter- und Bauern-Macht und zur Gewährleistung des zuverlässigen Schutzes d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vor allem der staatlichen Sicherheit der DDR sowie der öffentlichen Ordnung;
- Unterstütz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im Interesse eines hohen Wirtschaftswachstums, um die Einheit von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kontinuierlich fortzuführen, den Leistungswillen der Werktätigen zu fördern und volkswirtschaftliche Verluste zu verhindern;

— Auspräg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durch Einbeziehung der Werktätigen in die gerichtliche Tätigkeit, insbesondere die Erhöhung der Rolle der Schöffen und der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 Beitrag zur Ent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tensweisen, zur Erhöhung der Geborgenheit der Bürger sowie zur Festigung ihres Vertrauensverhältnisses zur Partei der Arbeiterklasse und zum sozialistischen Staat; besonders sind der Schutz des Lebens, der Gesundheit, des persönlichen Eigentums sowie die Garantien für die Realisierung ihrer Rechte weiter auszubauen;

— Förderung der sozialistischen Persönlichkeitsentwicklung Jugendlicher und die Gestaltung sozialistischer Familienbeziehungen.

Die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übertragenen Aufgaben setzt eine zielgerichtete Leitungstätigkeit unter der Führung der Grundorganisation der SED voraus. Sie hat sich auf Schwerpunkte zu konzentrieren und zu gewährleisten, daß auf allen Gebieten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eine hohe politisch-juristische Qualität der Arbeit gesichert wird. Das erfordert, den demokratischen Zentralismus strikt durchzusetzen. Dabei is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in den einzelnen Ebenen zu stärken.

Die verantwortungsbewußte Handhabung von Recht und Gesetz, die enge Verbundenheit mit den Werktätigen, Aufgeschlossenheit und Konsequenz im Umgang mit den Menschen gehören dabei zum Berufsethos der Richter unseres Landes und bestimmen die Arbeitsweise der Mitarbeiter der Gerichte.

Die Gerichte haben ihre Tätigkeit in di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des Territoriums einzuordnen. Sie haben zur Gewährleistung der Führungstätigkeit der leitenden Parteiorgane beizutragen und das Zusammenwirken mit den Staats-, Justiz- und Sicherheits-

organen zu gewährleist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besonders den Gewerkschaften und der FDJ ist eng zusammenzuarbeiten.

Aufmerksam und sorgfältig haben die Gerichte alle gesellschaftlichen Kräfte, Kollektive und Bürger zu unterstützen, die sich für die Verwirklichung von Recht und Gesetz, von Ordnung und Sicherheit einsetzen.

Große Bedeutung erlangt die rechtserzieherische und rechtspropagandistische Tätigkeit der Gerichte. Sie hat noch stärker die Einheit von Pflichten und Rechten zu verdeutlichen und beizutragen, das Treueverhalten zur sozialistischen Heimat, die Förderung des Leistungswillens der Werktätigen sowie eine sozialistische Lebensweise auszuprägen.

Für die Gerichte der DDR ergeben sich aus dem XI. Parteitag folgende Aufgaben:

II.

1. Die Haupttätigkeit der Gerichte ist die Rechtsprechung. Diese ist Ausübung sozialistischer Staatsmacht mit spezifischen Mitteln und dient dem Schutz des Staates und der Rechte seiner Bürger sowie der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 Sie erfolgt nach dem Grundsatz, daß alle Bürger vor dem Gesetz gleich sind. Ihre Qualität ist entsprechend den vom Parteitag formulierten Aufgaben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und Rechtssicherheit zu erhöhen. Jede Entscheidung muß politisch durchdacht, gesetzlich richtig, überzeugend begründet und gesellschaftlich wirksam sein.

Das erforder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für die Bearbeitung und Entscheidung der Verfahren zu erhöhen. In jeder Phase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ist auf die strikte Gesetzlichkeit der Verfahrensdurchführung zu achten. Im besonderen Maße gilt das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in Strafsachen. Beweise sind sorgfältig zu erheben und zu würdigen. Das Recht auf Verteidigung ist umfassend zu gewährleisten. Im Strafverfahren hat das Gericht zu garantieren, daß jeder Schuldige zur Verantwortung gezogen, aber kein Unschuldiger bestraft wird.

Bei der Durchführung der Strafverfahren ist hinsichtlich der Strafzumessung weiterhin von den bewährten Grundsätzen der Individualisierung und Differenzierung auszugehen. *Die konsequente Anwendung des Strafrechts ist besonders gegenüber solchen Tätern zu gewährleisten, die die staatliche Sicherheit und öffentliche Ordnung gefährden, die mit ihren Handlungen die Bevölkerung beunruhigen, die sich auf Kosten des sozialistischen Staates oder der Bürger bereichern, die parasitär leben, die unbelehrbar und nicht gewillt sind, die elementarsten Regeln des Zusammenlebens zu erfüllen.*

Das Niveau der Arbeit der Rechtsmittelsenate ist zu erhöhen. Die Überprüfbarkeit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urch ein Gericht zweiter Instanz ist eine Garantie sozialistischer Gesetzlichkeit und Gerechtigkeit, dient der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und stärkt das Vertrauen der Bürger zum sozialistischen Staat und zu seinen Gerichten. Das Rechtsmittelverfahren muß gewährleisten, daß alle materiellen und prozessualen Normen richtig angewandt und fehlerhafte Entscheidungen korrigiert werden.

2.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erfolgt als Verfassungsauftrag durch das Oberste Gericht und im jeweiligen Territorium durch die Bezirksgerichte. Eine effektive Leitung der Rechtsprechung bedingt die konsequente Durchsetzung des Prinzips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bei Wahr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für ihre Entscheidungen. Die vom Plenum, Präsidium und den Kollegien des Obersten Gerichts sowie die in gemeinsamen Standpunkten gegebenen Orientierungen sind voll durchzusetzen. Die Kontrolle der Umsetzung dieser Dokumente ist wirksam auszubauen.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hat sich vor allem auf die inhaltlichen Schwerpunkte gerichtlicher Tätigkeit zu konzentrieren.

Daraus ergeben sich insbesondere folgende Aufgaben:

-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zu gewährleisten;
 - die Rechtsprechung zu analysieren und Schlußfolgerungen für die Leitungstätigkeit zu ziehen;
 - verbindliche Orientierungen zur Anwendung der Gesetze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für die Spruchpraxis zu geben;
 - die Mitwirkung gesellschaftlicher Kräfte differenziert unter Berücksichtigung einer effektiven und erzieherisch wirksamen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zu gestalten;
 - die Rechtsprechung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anzuleiten und
 - gegen im Zusammenhang mit Gerichtsverfahren festgestellten Verstößen gegen die sozialistische Rechtsordnung mit den gesetzlich übertragenen Befugnissen, insbesondere der Gerichtskritik, vorzugehen sowie mit Hinweisen und Empfehlungen zur Beseitigung von Ursachen und begünstigenden Bedingungen von Straftaten und anderen Rechtsverletzungen beizutragen.
3. Die Unterstützung der innen- und außenpolitischen Zielstellungen von Partei und Regierung, der zuverlässige Schutz d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Rechtsordnung, der Errungenschaften des Volkes und des friedlichen Lebens der Bürger gegen jeden Angriff und unter allen Lagebedingungen ist ein Klassenauftrag an die Gerichte auf allen Rechtsgebieten.

Durch ihre Rechtsprechung haben sie im engen Zusammenwirken mit den anderen Justiz- und Sicherheitsorganen einen wirksamen Beitrag zu leisten, die Macht der Arbeiter und Bauern, die

Souveränität der DDR, ihre territoriale Integrität, die Unverletzlichkeit der Grenzen und Transitwege zuverlässig zu schützen sowie die Sicherheit in unserem Lande zu gewährleisten. Jede Form der juristischen Aggression ist strikt zurückzuweisen. Allen subversiven Angriffen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n Grundlagen unseres Staates ist entschieden zu begegnen. Versuche, die öffentliche Ordnung zu untergraben und den realen Sozialismus und seine Errungenschaften zu diffamieren, sind energisch zu unterbinden. Dem Handeln engagierter Bürger zur Durchsetzung von Gesetzlichkeit, Ordnung und Sicherheit ist Schutz und Unterstützung zu geben.

Im Rahmen ihrer Zuständigkeit haben die Gerichte einen Beitrag zur Erfüllung der außenwirtschaftlichen Aufgaben zu leisten. Sie haben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Rechte der Bürger und Betriebe gegenüber Verpflichteten im Ausland strikt zu gewährleisten und darauf hinzuwirken, daß sie ihre Rechte gegenüb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n anderen Staaten in vollständiger Übereinstimmung mit den Gesetzen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der DDR ausüben und geltend machen. Die Rechte von Ausländern in der DDR sind auf der Grundlage der Rechtsordnung der DDR zu gewährleisten. Verfahren mit Ausländerbeteiligung sind unter Wahrung der Interessen der DDR und ihrer Bürger zügig und konzentriert durchzuführen.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der in Rechtshilfe- und Konsularverträgen enthaltenen Verpflichtungen ist ein Beitrag der Gerichte zur Stärkung des internationalen Ansehens und der Autorität unseres sozialistischen Staates.

4. Die vom XI. Parteitag beschlossenen zehn Schwerpunkte der ökonomischen Strategie stellen hohe Anforderungen an die Gerichte. Ihre Tätigkeit ist auf die Herausbildung und Festigung einer bewußten Einstellung zur schöpferischen und verantwortungsvollen Arbeit aller Werktätigen zu richten. Die Gerichte haben das Recht so anzuwenden, daß damit Schäden vorgebeugt wird und ökonomische Reserven erschlossen werden. Jede Entscheidung muß unter strikter Beacht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Zusammenhänge und Auswirkungen ergehen.

Die Gerichte haben auf der Grundlage des gemeinsamen Dokumentes der zentralen Justizorgane zur Verwirklich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 dazu beizutragen, daß die Arbeits- und Produktionssicherheit erhöht, die technologische Disziplin gefestigt, das gesellschaftliche Arbeitsvermögen voll genutzt und die Qualität der Erzeugnisse verbessert werden;
- den Kollektiven der Werktätigen zu helfen, den Kampf um vorbildliche Ordnung, Disziplin und Sicherheit zielstrebig zu organisieren;
- den Leistungswillen der Werktätigen und die weitere Verbesserung der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zu fördern.

Die Hauptanstrengungen bei der Unterstütz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durch die Rechtspre-

chung sind auf den wirksamen Schutz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und der Volkswirtschaft mit allen rechtlichen Mitteln zu konzentrieren. Die Gerichte haben einen wirksamen Beitrag im Kampf gegen Havarien, Brände, Störungen der Produktion, Mißwirtschaft, Vergeudung und Entwendung sozialistischen Eigentums sowie andere kriminelle Handlungen und sonstige Rechtsverletzungen zu leisten, die Schäden und Verluste am Volksvermögen verursachen.

Die Schadenswiedergutmachung ist nachhaltig durchzusetzen. Jedem Täter müssen die zu Unrecht erlangten Vorteile konsequent entzogen werden. Die Realisierung der dem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Forderungen ist zügig zu sichern. Der Schutz der Volkswirtschaft erlangt im Bereich der Schlüsseltechnologien zunehmende Bedeutung. Hier kommt es vor allem auch auf die strikte Gewährleistung des Geheimnisschutzes an.

Im Zusammenhang mit der Entwicklung und Anwendung der Schlüsseltechnologien wachsen die Anforderungen an die Risikobereitschaft. Die Rechtsprechung muß sichern, daß die Übernahme eines vertretbaren Risikos gefördert wird und nicht zu Nachteilen für den Verantwortlichen führt.

Durch die Rechtsprechung und ihre sonstige Tätigkeit haben die Gerichte zur Realisier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die Kombinate und Betriebe zu unterstützen, das Arbeitsrecht noch wirksamer als Leitungsinstrument zu nutzen, insbesondere zur Durchsetzung des Grundsatzes der Einheit von Pflichten und Rechten der Werktätigen, des Leistungsprinzips, der sozialistischen Rationalisierung, der sozialistischen Arbeitsdisziplin und der Sicherung der Rechte der Gewerkschaften. Für die langfristige und vorausschauende Vorbereitung der Werktätigen auf die wachsenden Anforderungen haben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 Fortschritt, vor allem die Entwicklung der Schlüsseltechnologien, besondere Bedeutung.

Die Neuerer- und Patentverfahren sind mit dem Ziel durchzuführen, daß davon Impulse insbesondere für die Rationalisierung, Modernisierung und Effektivierung der Produktion sowie für Fortschritte in der Material- und Energieökonomie ausgehen. Auf die Überwindung aller dem Schöpfervermögen der Werktätigen entgegenstehenden Hemmnisse ist konsequent hinzuwirken.

Die Rechtsprechung hat die Verwirklichung des Wohnungsbauprogramms als Kernstück der Sozialpolitik zu fördern. Bei begründeten Garantieansprüchen der Bürger aus den Versorgungsbeziehungen mit Handels- und Dienstleistungseinrichtungen haben die Gerichte Einfluß auf die Verbesserung der Qualität der Waren und Leistungen zu nehmen. Die erzieherische Einwirkung auf die Bürger zur Erfüllung der dem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Zahlungsansprüche, insbesondere des Mietpreises und anderer selbstverständlicher Zahlungsverpflichtungen, ist weiter zu erhöhen.

5.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sordnung garantiert die Durchsetzung von Recht und Gesetzlichkeit und eine hohe Rechtssicherheit als kostbare Errungenschaften und Werte des Sozialismus. Die Rechtsprechung der Gerichte ist deshalb darauf auszurichten, *einen wirksamen Beitrag* zur Ent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tensweisen, *zur Erhöhung des Wohlbefindens und der Geborgenheit der Bürger* sowie zur Festigung ihres Vertrauensverhältnisses zur Partei der Arbeiterklasse und zum sozialistischen Staat zu leisten. Besonders sind das Leben, die Gesundheit und das persönliche Eigentum der Bürger zu schützen sowie die Garantien für die Realisierung ihrer Rechte weiter auszubauen. *Energisch sind Straftaten zu bekämpfen*, die das friedliche Leben der Bürger stören, *wie Gewalttätigkeiten, Einbrüche in Wohnungen und anderen Räumlichkeiten*, Rowdytum, Sexualstraftaten u. a.

Soweit Straftäter *aus vorangegangenen Bestrafungen keine Lehren ziehen* und hartnäckig erneut Straftaten begehen, haben die Gerichte *nachhaltig Maßnahm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anzuwenden* und dabei deutlich zu machen, daß es zum Schutz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r Bürger notwendig ist, in den erforderlichen Fällen strenge Strafen auszusprechen.

Besondere Bedeutung erlangt der Schutz der Rechte der durch Straftaten Geschädigter. Diesen Bürgern ist durch die Gerichte im Rahmen ihrer Möglichkeiten sowie durch eine enge Zusammenarbeit mit anderen Organen (z. B. Staatliche Versicherung) unbürokratisch zu helfen. Die Gerichte haben entsprechend ihren Möglichkeiten die Leistungsbereitschaft der Bürger, ihr aktives Eintreten für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ebenso wie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ihrer Pflichten im gesellschaftlichen Zusammenleben zu fördern. Dazu gehört die Sicherung der ununterbrochenen Beschäftigung der Werktätigen bei einem notwendigen Arbeitsplatzwechsel als Ausdruck des Grundrechts auf Arbeit, der Schutz der Bürger vor spekulativen Übervorteilungen in den Bürger-Bürger-Beziehungen und die Sicherung einer konsequenten und zügigen Vollstreckung gerichtlich festgestellter Ansprüche, die von den Verpflichteten freiwillig nicht erfüllt werden.

Die Gerichte haben dazu in allen Verfahren die rechtlichen Regelungen des Straf- und Zivilprozessrechts gewissenhaft zu beachten und bei voller Sicherung der Rechte der Prozeßbeteiligten durchzuführen. Durch eine bürgernahe, überzeugende und kulturvolle Gerichtspraxis ist die Autorität und das Ansehen der Gerichte weiter zu heben.

6. Die Gerichte haben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Durchsetzung der Ziele der sozialistischen Jugendpolitik und die Entwicklung sozialistischer Familienbeziehungen zu fördern. Sie haben die gesamtgesellschaftlichen Anstrengungen zur Erziehung und Selbsterziehung junger Menschen wirksam zu unterstützen.

Die Anwendung des Strafrechts hat der Persönlichkeitsentwicklung Jugendlicher und ihrem Hineinwachsen in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zu dienen. Die prozessualen Regelungen für die 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gegenüber Jugendlichen —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Einbeziehung der Erziehungsberechtigten und anderer Erziehungsträger — sind konsequent zu berücksichtigen. Es sind die vorgesehenen Maßnahm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noch differenzierter anzuwenden und die gesellschaftlichen Potenzen für die Erziehung jugendlicher Straftäter,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Strafen ohne Freiheitsentzug, voll auszuschöpfen. Bei der Feststellung und Verwirklich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Jugendlicher haben die Gerichte den entwicklungsbedingten Besonderheiten verstärkte Beachtung zu schenken.

In Ehescheidungsverfahren, vor allem in denen Kinder betroffen sind, sind die Aussöhnungsbestrebungen zu verstärken, wenn für die Fortsetzung der Ehe noch Voraussetzungen bestehen. Diese Verfahren erfordern einschließlich der Entscheidungen über das Erziehungsrecht und den Unterhalt besondere Aufmerksamkeit. Die erzieherische Einflußnahme des Gerichts hat bei Ehescheidungen auch zu sichern, daß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geschiedenen Ehegatten ihren Kindern gegenüber verantwortungsbewußt wahrgenommen werden. Die Fragen, die sich aus der Verbindung von Berufstätigkeit und Mutterschaft bei der Erziehung der Kinder ergeben, sind im Zusammenwirken der Gerichte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n Organen, den Betrieben und Einrichtungen im Territorium besser zu lösen.

7. Die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übertragenen Aufgaben setzt eine zielgerichtete Leitungstätigkeit voraus. In ihrem Mittelpunkt steht:

- die Erhöhung der Qualität der Rechtsprechung und ihrer Wirksamkeit,
- die Arbeit mit den Kadern und die Entwicklung eines den hohen Arbeitsanforderungen gerecht werdenden Arbeitskollektivs,
- die Sicherung einer hohen Qualität der Arbeit mit den Schöff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und der Einbeziehung Werktätiger in gerichtliche Verfahren,
- die Öffentlichkeitsarbeit,
- die Erhöhung des Niveaus der Arbeitsorganisation, Informationstätigkeit und der analytischen Arbeit und
- die Verbesserung der Arbeit mit Eingaben,
- die Erfüllung der Aufgaben auf dem Gebiet der Haushaltswirtschaft unter Beachtung des Prinzips der strengsten Sparsamkeit.

Die Ergebnisse und Leistungen jedes Gerichts hängen wesentlich von der Tätigkeit seines Direktors ab. Seine Rolle im Leitungsprozeß bei

der Verwirklichung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ist zu erhöhen.

Besonderes Augenmerk ist der Tätigkeit der Kreisgerichtsdirektoren zu widmen. Maßstab der Arbeit sind die in der Dokumentation „Führungsbeispiel Kreisgericht Fürstenwalde“ enthaltenen Anforderungen.

8. Die Vervollkommnung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als Aufgabe und Methode der Leitung der Gerichte erfordert die unabdingbare Durchsetzung zentraler Richtlinien und Beschlüsse, Anordnungen, Weisungen und Orientierungen, die Kontrolle ihrer Durchführung, die kritische Bewertung der erreichten Ergebnisse, die Berichterstattung gegenüber den vorgeordneten Organen sowie den weiteren Ausbau des Erfahrungsaustausches und des Leistungsvergleiches als Formen der Leitung.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Leitung erfordert die Verbesserung des Niveaus der Informations-tätigkeit, die strikte Einhaltung der Informationsdisziplin und die Erhöhung der inhaltlichen Aussagekraft der Informationen. Als Grundlage dafür ist der analytischen Arbeit auf allen Ebenen und der realen Einschätzung der Arbeitsergebnisse besonderes Augenmerk zu widmen.

Die Direktoren haben die uneingeschränkte Übermittlung leitungsrelevanter Informationen an die vorgeordneten Leitungsorgane — insbesondere zu politisch bedeutsamen, folgeschweren, die Bevölkerung beunruhigenden und anderen wichtigen Verfahren sowie politisch bedeutsamen Problemen aus der Leitungstätigkeit zu sichern.

9. Die Verbesserung der Qualität der Arbeit erfordert die Erhöhung des politischen und fachlichen Niveaus der Kader. Sie müssen sich durch Charakterfestigkeit, hohes Staatsbewußtsein, durch konsequente Verteidigung der Interess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Feinfühligkeit gegenüber den Belangen der Bürger und durch verantwortungsbewußte Handhabung von Recht und Gesetz als Ausdruck einer hohen Rechts-sicherheit auszeichnen.

In diesem Sinne ist die berufsethische Erziehung der Juristen, auch unter Nutzung der Möglichkeiten der VdJ, zu verbessern.

Bei den Leitern ist die Fähigkeit, sich auf die neuen Anforderungen einzustellen, aktiv und schöpferisch die zentralen Anforderungen zu verwirklichen, weiter auszuprägen. Die Kraft und Fähigkeiten der jungen Kader an den Gerichten für die Lösung der Aufgaben ist voll zu nutzen. Hoch- und Fachschulkadern ist in der Phase ihrer Einarbeitung größte Unterstützung zu gewähren. Die rechtzeitige Vorbereitung junger Kader auf die Übernahme von Leitungsfunktionen ist zu sichern.

Insgesamt muß das Vertrauen in die Kraft und Fähigkeit der Jugend mit der Übertragung von Verantwortung und im Fordern hoher Leistungen zum Ausdruck gebracht werden. Die planmäßige

zentrale und bezirkliche Qualifizierung der Juristen und die eigenverantwortliche Weiterbildung ist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ür die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übertragenen Aufgaben. Sie muß auf die systematische Vertiefung und Erneuerung des gesellschaftspolitischen, ökonomischen und fachspezifischen Wissens und die Erhöhung des Bildungs- und Kulturniveaus gerichtet sein.

10. Die Wirksamkeit der Arbeit der mittleren juristischen Kader ist weiter zu erhöhen und ihre Verantwortung für die Festigung des Vertrauensverhältnisses zwischen den Bürgern und den Gerichten, die Erhöhung der Staatsautorität und die Realisierung der Gesamtaufgabenerfüllung der Gerichte weiter auszuprägen.

Das erfordert die Erhöhung der Rolle und Verantwortung des leitenden Sekretärs und seine stärkere Einbeziehung in die Leitungstätigkeit des Direktors.

Der leitende Sekretär muß vor allem dazu beitragen, daß

- die Arbeit auf dem Gebiet der Vollstreckung weiter qualifiziert,
- die Tätigkeit der Rechtsantragsstelle vervollkommt,
- ein hohes Niveau der Arbeitsorganisation gesichert

wird und die systematische Weiterbildung der mittleren juristischen Kader und der Mitarbeiter der ihnen nachgeordneten Strukturbereiche erfolgt. Seine Verantwortung für die Entwicklung eines schöpferischen Arbeitsklimas ist zu erhöhen.

11. Die Rolle der Schöffen in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ist zu heben. Ihre Hauptaufgabe ist die Rechtsprechung. Es ist zu gewährleisten, daß die Schöffen ihre Funktion als gleichberechtigte Richter voll wahrnehmen können. Ihnen sind in größerem Umfange auch konkrete Aufgaben zur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zu übertragen, insbesondere zur Kontrolle des Erziehungs- und Bewährungsprozesses, zur Kontrolle der Verwirklichung von Gerichtskritiken und Hinweisschreiben sowie zur Einflußnahme auf die Erfüllung von Zahlungsverpflichtungen Werk-tätiger.

Die eigenständige Rechtspropaganda und Rechtserziehung der Schöffen ist zu unterstützen. Ihnen sind Erfahrungen zu vermitteln, wie sie in ihren Betrieben und Wohngebieten einen größeren Beitrag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von Ordnung und Sicherheit leisten können. Verstärkt ist darauf hinzuwirken, daß die Schöffenkollektive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staatlichen Leitern, den Parteileitungen sowie den gewerkschaftlichen Vorständen und Leitungen in die Lösung gesamtbetrieblicher und territorialer Aufgaben zur Durchsetzung von Recht und Gesetzlichkeit einbezogen werden. Die Arbeit der Schöffenaktive ist vor allem darauf zu richten, die verantwortungsbewußte Teilnahme der Schöffen in der Rechtsprechung zu sichern,

die Qualifikation der Schöffen zu erhöhen, die Auswertung ihres gerichtlichen Einsatzes zu gewährleisten, die Schöffen in die vorbeugende Rechtsarbeit in den Betrieben sowie in den Wohngebieten der Städte und in den Gemeinden einzubeziehen und die Wirksamkeit der Schöffenkollektive weiter zu erhöhen.

12. Die Gerichte haben in ihrem Territorium eine hohe Wirksamkeit der Arbeit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zu gewährleisten. Vor allem ist darauf Einfluß zu nehmen, daß die Beratungen fristgemäß durchgeführt, mit einer der Gesetzmäßigkeit entsprechenden Entscheidung abgeschlossen werden und eine hohe erzieherische Wirksamkeit haben. Die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sind zu befähigen, den wachsenden Anforderungen in der Rechtsprechung, bei der Rechtsverwirklichung und bei der Rechtserziehung gerecht zu werden. Die Schiedskommissionen sind in ihrer Tätigkeit aktiv zu unterstützen. Die Schulungen ihrer Mitglieder sind planmäßig durchzuführen und die Gewerkschaften bei der Anleitung der Konfliktkommissionen und der Qualifizierung ihrer Mitglieder zu unterstützen. Die Möglichkeiten der Schiedskommissionen zur Durchsetzung der Stadt- und Gemeindeordnungen sind zu nutzen. Es ist darauf hinzuwirken, daß ihnen geeignete Ordnungswidrigkeiten zur Beratung und Entscheidung übergeben werden.

In der Arbeit der Beiräte für Schiedskommissionen sind alle gesetzlich bestimmten Aufgaben zur Erhöhung der Wirksamkeit der Schiedskommissionen planmäßig und gründlich zu beraten.

13. Die Orientierungen und Anforderungen im Beschluß des Sekretariats des ZK der SED vom 24. Oktober 1984 zur Berichterstattung der SED-Kreisleitung Annaberg sind verbindliche Aufgabenstellungen für die Gerichte. Über Erkenntnisse und Erfahrungen aus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die für die Führungstätigkeit der Partei bedeutsam sind, sind die leitenden Parteiorgane zu informieren.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als Organe der einheitlichen Staatsmacht haben die Gerichte eng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deren Organen zusammenzuarbeiten und ihre Tätigkeit noch besser in die gesamt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der Territorien einzuordnen. Die im Gesetz über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dazu enthaltenen Verpflichtungen, besonders zur regelmäßigen Berichterstattung über ihren Beitrag zur Durchsetz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mäßigkeit und über die gesellschaftliche Wirksamkeit der Rechtsprechung, sind mit hoher Qualität zu erfüllen.

Auf der Grundlage der langfristigen Programme der Kreistage und anderen Beschlüsse örtlicher Volksvertretungen haben die Gerichte territoriale und betriebliche Maßnahmen zur Verwirklichung von Recht und Gesetz, von Ordnung und Sicherheit sowie zur Rechtserziehung und Rechtspropaganda — besonders in Führungsbeispielen und in Schwerpunktbetrieben — unter Nutzung ihrer spezifischen Möglichkeiten zu unterstützen. Sie

wirken an der Verallgemeinerung guter Ergebnisse mit, wobei den Kombinat, Betrieben und Einrichtungen verstärkt Erfahrungen aus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zur Vorbeugung von Rechtsverletzungen zu vermitteln sind.

14. Die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r Staatsanwaltschaft, den Staatlichen Notariaten sowie den Sicherheitsorganen unter strikter Beachtung der Eigenverantwortung eines jeden Organs ist weiterzuentwickeln. Es ist auf ein wirksames, einheitliches, auf Schwerpunkte ausgerichtetes, koordiniertes Zusammenwirken vor allem bei der Einordnung der Tätigkeit der Justiz- und Sicherheitsorgane im Kampf gegen die Kriminalität und anderen Rechtsverletzungen im Territorium auszurichten.

Die vertrauensvolle und sachbezogene Zusammenarbeit mit den Kollegien der Rechtsanwälte ist weiterzuentwickeln.

Regelmäßige Beratungen gemeinsam berührender Probleme in Präsidien der Bezirksgerichte und Dienstbesprechungen der Kreisgerichte mit den Vorständen und den Zweigstellen der Kollegien, Qualifizierungsmaßnahmen und die Einbeziehung der Rechtsanwälte in die Rechtspropaganda und Rechtserziehung dienen dieser Zielstellung.

15. Rechtserziehung und Rechtspropaganda sind in die politisch-ideologische Arbeit des Territoriums einzuordnen und auf die zentral herausgegebenen Schwerpunkte zur Erläuterung des sozialistischen Rechts zu konzentrieren.

Die erzieherische Ausstrahlung der Verfahren, besonders durch Verhandlungen vor erweiterter Öffentlichkeit — in den erforderlichen Fällen auch in den Betrieben — und Verfahrensauswertungen sowie durch gezielte Nutzung anderer Formen gerichtlicher Öffentlichkeitsarbeit ist weiter zu erhöhen.

Aktivitäten und Initiativen der Werktätigen zur Festigung der Gesetzmäßigkeit, von Ordnung, Disziplin und Sicherheit sind zu unterstützen.

Die rechtserzieherische und rechtspropagandistische Arbeit unter der Jugend ist auf die Wahrnehmung ihrer staatsbürgerlichen Verantwortung, die Mit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auf ihre aktive und eigenverantwortliche Durchsetzung von Ordnung, Sicherheit und Disziplin im Arbeits- und Freizeitbereich auszurichten.

Zu sichern ist, daß

- die Einheit von Rechtsprechung, Rechtserziehung und Rechtspropaganda umfassend durchgesetzt und die Öffentlichkeitsarbeit als unverzichtbarer Bestandteil der täglichen Arbeit geleitet und geplant wird,
- den Bürgern Rechtskenntnisse, vor allem über rechtliche Regelungen, die die staatsbürgerlichen und die grundlegenden Rechte und Pflichten in der Gesellschaft beinhalten, vermittelt werden,
- der politisch-ideologische Gehalt sowie die Formen und Methoden der rechtspropagan-

distischen Maßnahmen weiter entwickelt werden und

- die Zusammenarbeit mit den Journalisten zur Gewährleistung einer massenwirksamen Rechtspublizistik in den Medien, insbesondere in den Kreisen und Bezirken, vertieft wird.

Die Gerichte haben bei ihrer rechtspropagandistischen und rechtserzieherischen Arbeit eng mit der VdJ und der Urania zusammenzuarbeiten.

16. Die Qualität und Effektivität der Arbeit der Gerichte, ihre Autorität und ihr Ansehen bei den Bürgern werden wesentlich von der Art und Weise der Realisierung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bestimmt. Die Leitungstätigkeit ist deshalb im besonderen auch auf die Erfüllung der in diesem Zusammenhang zu lösenden Aufgaben auszurichten. Es ist vor allem

- die fristgerechte Einleitung der Verwirklichung der Maßnahm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 die wirksame Kontrolle der Bewährungsverurteilungen,
- die unverzügliche Realisierung ausgesprochener Geldstrafen,
- die zügige und konsequente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insbesondere auf dem Gebiet des Unterhalts, zur Sicherung der Ansprüche von Trägern gesellschaftlichen Eigentums und der durch Straftaten geschädigten Bürger

zu sichern.

17. Große Anstrengungen sind darauf zu richten, im Arbeitsstil den Forderungen nach enger Verbundenheit mit den Werkträgern, Aufrichtigkeit, Konsequenz und Gerechtigkeit im Umgang mit den Menschen, wissenschaftlicher Arbeitsweise, strikter Beachtung der Gesetze und hoher Staatsdisziplin sowie nach konsequenter Durchsetzung des Prinzips „Arbeitszeit ist Leistungszeit“ zu entsprechen.

Dazu sind

- alle Verfahren konzentriert, zügig und rationell bei voller Sicherung der Rechte der Prozeßbeteiligten durchzuführen,
- durch eine bürgernahe, überzeugende und kulturvolle Gerichtspraxis das Vertrauensverhältnis der Bürger zu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weiter zu festigen,
- die Bürger bei der Wahrnehmung ihrer Angelegenheiten korrekt, höflich und mit hoher Sachkunde zu behandeln,

- effektiv mit dem Bestellsystem zu arbeiten, damit Wartezeiten für die Bürger bei der Wahrnehmung ihrer Rechtsangelegenheiten verkürzt werden,

- die Sprechstunden- und Rechtsauskunftstätigkeit in betrieblichen und territorialen Schwerpunkten — auch unter Mitwirkung der gesellschaftlichen Kräfte — entsprechend den territorialen Erfordernissen und Möglichkeiten, weiter zu entwickeln,

- eine hohe Qualität und tagfertige Bearbeitung des dienstlichen Schriftgutes zu sichern.

Große Beachtung ist der Verbesserung der Eingabenbearbeitung zu schenken. Dabei ist zur schnellen und unbürokratischen Lösung der den Anliegen zugrunde liegenden Konflikte das vertrauensvolle Gespräch mit den Bürgern und der enge Kontakt zu ihren Kollektiven zu suchen und die analytische Auswertung der Eingaben für die Verbesserung der Arbeit, den Inhalt der Qualifizierungsmaßnahmen sowie die Erziehung der Mitarbeiter zu nutzen.

18. Der Durchsetzung einer rationellen Arbeitsorganisation am Gericht und der weiteren Erhöhung der Gerichtskultur ist besonderes Augenmerk zu widmen. Für den Aufbau rechnergestützter Arbeitsplätze an den Gerichten sind planmäßig die politisch-ideologischen, kadermäßigen und organisatorischen Voraussetzungen zu schaffen. Bereitgestellte Bürocomputer sind mit dem Ziel der Erhöhung der Qualität und Effektivität der Arbeit umfassend zu nutzen und optimal auszulasten. Für die Arbeit mit neuer Bürotechnik sind vornehmlich junge Mitarbeiter zu gewinnen und zielstrebig vorzubereiten. Die Bildung entsprechender Jugendkollektive ist anzustreben.

19. Zur umfassenden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obliegenden Aufgaben ist die Einsatz- und Leistungsbereitschaft der Mitarbeiter weiter zu erhöhen.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Gewerkschaftsorganisationen ist ein solches Arbeitsklima zu entwickeln, daß ein kollektives kameradschaftliches Zusammenwirken entsteht und sich jeder für die Erfüllung der Gesamtaufgaben verantwortlich fühlt. Initiativen von Arbeitskollektiven und Mitarbeitern, die sich in Verpflichtungen zur schnelleren und besseren Erfüllung der Aufgaben niederschlagen, sind zu wecken, zu fördern und durch moralische und materielle Maßnahmen zu stimulieren. Dabei sind Erfahrungsaustausche und Leistungsvergleiche sowohl am Gericht als auch unter Leitung des Bezirksgerichts innerhalb des Bezirkes als wichtige Formen der Leitung weiter zu entwickeln.

Berlin, den 16. Juli 1986

gez. Dr. Sarge
Präsident

gez. Heusinger
Minister

Nummer 50

Nachschlagewerk: ja
 BGHS: ja
 Veröffentlichung: ja

StGB §§ 2, 7
 GG Artikel 103 Abs. 2

Internationaler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vom 19. Dezember 1966 (IPbürgR)

WStG § 5

Grenzgesetz-DDR

Zur Beurteilung vorsätzlicher Tötungshandlungen von Grenzsoldaten der DDR an der Berliner Mauer.

BGH, Urteil vom 3. November 1992

— 5 StR 370/92 —
 LG Berlin

Bundesgerichtshof**Im Namen des Volkes**

5 StR 370/92

Urteil

vom 3. November 1992
 in der Strafsache
 gegen

1. W

2. H

wegen Totschlages

Der 5. Strafsenat des Bundesgerichtshofs hat aufgrund der Verhandlung vom 23. Oktober 1992 in der Sitzung vom 3. November 1992, an der teilgenommen haben:

Vorsitzender Richter am Bundesgerichtshof

die Richter am Bundesgerichtshof als beisitzende Richter,

Bundesanwalt als Vertreter der Bundesanwaltschaft,

Rechtsanwalt als Verteidiger des Angeklagten W,

Rechtsanwältin als Verteidigerin des Angeklagten H,

Justizangestellte als Urkundsbeamtin der Geschäftsstelle,

für Recht erkannt:

Die Revisionen der Angeklagten W und H gegen das Urteil des Landgerichts Berlin vom 5. Februar 1992 werden verworfen.

Jeder der Angeklagten hat die Kosten seines Rechtsmittels zu tragen.

— von Rechts wegen —

Gründe**A.**

Die Jugendkammer hat die Angeklagten W (geboren am 11. April 1964) und H (geboren am 16. Juli 1961) wegen Totschlages verurteilt, und zwar den Angeklagten W zu einer Jugendstrafe von einem Jahr und sechs Monaten und den Angeklagten H zu einer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und neun Monaten; sie hat die Vollstreckung beider Strafen zur Bewährung ausgesetzt.

Die Angeklagten waren als Angehörige der Grenztruppen der DDR — W als Unteroffizier und Führer eines aus zwei Personen bestehenden Postens, H als Soldat — an der Berliner Mauer eingesetzt. Dort haben sie am 1. Dezember 1984 um 3.15 Uhr auf den 20 Jahre alten, aus der DDR stammenden S geschossen, der sich anschickte, die Mauer vom Stadtbezirk Pankow aus in Richtung auf den Bezirk Wedding zu übersteigen. S wurde, während er auf einer an die Mauer gelehnten Leiter hochstieg, von Geschossen aus den automatischen Infanteriegewehren der Angeklagten getroffen. Ein Geschöß aus der Waffe des Angeklagten W drang in seinen Rücken ein, als er bereits eine Hand auf die Mauerkrone gelegt hatte; diese Verletzung führte zum Tode. S wurde auch von einem Geschöß aus der Waffe des Angeklagten H getroffen, und zwar am Knie; diese Verletzung war für den Tod ohne Bedeutung. Die zeitliche Abfolge der beiden Schußverletzungen ist nicht geklärt. S wurde erst kurz vor 5.30 Uhr in das Krankenhaus der Volkspolizei eingeliefert, wo er um 6.20 Uhr starb. Er wäre bei unverzüglicher ärztlicher Hilfe gerettet worden. Die Verzögerung war die Folge von Geheimhaltungs- und Zuständigkeitsregeln, die den Angeklagten nicht bekannt waren. Die Angeklagten sind nicht bei der Bergung und dem Abtransport des Opfers eingesetzt worden.

Bei den Schüssen, die S getroffen haben, waren die Gewehre der beiden Angeklagten auf „Dauerfeuer“ eingestellt. Der Angeklagte H hat in den fünf Sekunden, während derer S auf der Leiter nach oben stieg, insgesamt 25 Patronen verschossen; aus dem Gewehr des Angeklagten W wurden 27 Patronen verschossen. Der Angeklagte W, der zuvor durch Zuruf zum Stehenbleiben aufgefordert und Warnschüsse abgegeben hatte, schoß aus einer Entfernung von 150 m aus dem Postenturm auf S. Der Angeklagte H, der beim Auftauchen des Flüchtlings auf Anweisung des Angeklagten W den Turm verlassen hatte, schoß, an die Mauer gelehnt, aus einer Entfernung von ca. 110 m. Beide Angeklagte wollten S, den sie nicht für einen Spion, Saboteur oder „Kriminellen“ hielten, nicht töten. Sie erkannten aber die Möglichkeit eines tödlichen Treffers. „Auch um diesen Preis wollten sie aber gemäß dem Befehl, den sie für bindend hielten, das Gelingen der Flucht verhindern. Um die Ausführung des Befehls auf jeden Fall sicherzustellen, der zur Vereitelung der Flucht auch die bewußte Tötung des Flüchtenden einschloß, schossen sie — das als Vorstufe vorgeschriebene gezielte Einzelfeuer auslassend — in kurzen Feuerstößen Dauerfeuer. Sie wußten, daß dieses zwar die Trefferwahrscheinlichkeit, wenn auch nicht in dem anvisierten Bereich, erhöhte, damit aber auch das Risiko eines tödlichen Schusses.“

Die Angeklagten waren vor dem Antritt ihres Dienstes an der Grenze gefragt worden, ob sie bereit seien, gegen „Grenzbrecher“ die Waffe einzusetzen; sie hatten die Frage ohne innere Vorbehalte bejaht. Die §§ 26, 27 des Grenzgesetzes vom 25. März 1982 (GBl. DDR I S. 197) waren bei ihrer Ausbildung erörtert worden. Nach § 27 Abs. 2 Satz 1 dieses Gesetzes war die Anwendung der Schußwaffe „gerechtfertigt, um die unmittelbar bevorstehende Ausführung oder die Fortsetzung einer Straftat zu verhindern, die sich den Umständen nach als ein Verbrechen darstellt“. Die Jugendkammer hat als wahr unterstellt, daß Verstöße gegen § 213 StGB-DDR („Ungezügelter Grenzübergang“) mit unmittelbarem Kontakt zur Berliner Mauer zur Tatzeit in den meisten Fällen nach § 213 Abs. 3 StGB-DDR als Verbrechen gewertet und mit mehr als zwei Jahren Freiheitsstrafe bestraft wurden; der Täter hält es für möglich, daß bei der Schulung der Angeklagten die Vorschrift des § 213 StGB-DDR, deren Grundtatbestand ein Vergehen war, ohne Differenzierung nach der Tatsache besprochen, also der Fluchtversuch an der Mauer generell als Verbrechen dargestellt worden ist.

Zur Befehlslage heißt es in den Urteilsgründen: „Die auch für die Angeklagten maßgebliche, von ihnen so verstandene und akzeptierte Befehlslage ging dahin, auf jeden Fall und letztlich mit allen Mitteln zu verhindern, daß der Flüchtende ‚feindliches Territorium‘ (hier: Berlin-West) erreichte. Dementsprechend lautete eine der bei der ‚Vergatterung‘ auch gegenüber den Angeklagten verwendeten Formulierungen in ihrem Kernsatz: ‚Grenzdurchbrüche sind auf keinen Fall zuzulassen. Grenzverletzer sind zu stellen oder zu vernichten‘ ... Vor jedem Ausrücken zum Grenzdienst erfolgte die Vergatterung; durch sie wurde den Grenzposten noch einmal der konkrete Einsatz und in allgemeiner Form die gestellte Aufgabe bewußt gemacht“. Die in der Schulung behandelte Befehls-

lage sah folgendes Handlungsschema vor, wobei jeweils zur nächsten Handlungsstufe überzugehen war, wenn die vorherige keinen Erfolg zeigte oder sich von vornherein als nicht erfolgversprechend darstellte: Anrufen des Flüchtenden — Versuch des Postens, den Flüchtenden zu Fuß zu erreichen — Warnschuß — gezielte Einzelfeuer, falls erforderlich mehrmals, auf die Beine — „Weiterschießen, egal wie, notfalls auch erschießen, bis die Flucht verhindert ist“. Als Faustregel galt: „Besser der Flüchtling ist tot, als daß die Flucht gelingt“.

Die Jugendkammer nimmt an, daß die Angeklagten mit bedingtem Vorsatz einen gemeinschaftlichen Totschlag begangen haben. Sie wendet die §§ 212, 213 StGB als das gegenüber dem Strafrecht der DDR mildere Recht an (Artikel 315 Abs. 1 EGStGB i. V. mit § 2 Abs. 3 StGB). Nach ihrer Ansicht war zwar das durch § 27 des Grenzgesetzes i. V. mit § 213 Abs. 3 StGB-DDR bestimmte Grenzregime an der Demarkationslinie mit den völkerrechtlichen Verpflichtungen der DDR und mit dem ordre public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vereinbar. Daraus folgt aber nach Auffassung der Jugendkammer nicht, daß zum Nachteil der Angeklagten der im Recht der DDR vorgesehene Rechtfertigungsgrund außer Betracht bleiben kann. Die Jugendkammer beruft sich insoweit auf Artikel 103 Abs. 2 GG sowie auf den Gesichtspunkt der Rechtssicherheit; die Rechtssicherheit habe hier Vorrang, weil ein Extremfall, wie er etwa in BGHSt 2, 234 zur Entscheidung stand, nicht vorgelegen habe.

Die Jugendkammer führt jedoch weiter aus: Auch wenn hiernach ein Rechtfertigungsgrund nach dem Recht der DDR in Betracht komme, so sei er gleichwohl wegen der besonderen Umstände der Tat auf die Schüsse der Angeklagten nicht anwendbar. Wie sich aus der Systematik der §§ 26, 27 des Grenzgesetzes ergebe, seien diese Vorschriften, ebenso wie die Bestimmungen des UZwG über den Schußwaffengebrauch, am 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 orientiert; § 27 Abs. 1 Satz 1 bezeichne die Anwendung der Schußwaffe als „die äußerste Maßnahme der Gewaltanwendung“. Eine den Gesichtspunkt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achtende Auslegung des Rechtfertigungsgrundes ergebe hier, daß das von den Angeklagten abgegebene Dauerfeuer nicht durch § 27 des Grenzgesetzes gedeckt, sondern nur Einzelfeuer gestattet gewesen sei; dafür spreche auch die Regelung des § 27 Abs. 5 des Grenzgesetzes, nach der Menschenleben nach Möglichkeit zu schonen sei. Zwar hätten die Angeklagten auf die Beine gezielt. Ihnen sei aber bewußt gewesen, daß bei einem Dauerfeuer mit kurzen Feuerstößen die Waffe nach dem ersten Schuß „auswandere“.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ist nach Ansicht des Landgerichts nicht durch dienstlichen Befehl (§ 5 WStG; § 258 StGB-DDR) entschuldigt gewesen. Befohlen sei in der Tatsituation Einzelfeuer auf die Beine gewesen; die Angeklagten seien in vorausgehendem Gehorsam über diesen Befehl hinausgegangen, um durch Dauerfeuer die Chance, den Flüchtling zu treffen und damit an der Überschreitung der Grenze zu hindern, zu erhöhen. „Daß die Angeklagten dabei geglaubt haben, dieses Vorgehen sei durch

den Befehl, den Grenzverletzter in jedem Fall zu stellen, ihn als letztes Mittel sogar zu vernichten (= töten), gedeckt, vermag sie nicht zu entlasten, denn die Ausführung des Befehls, einen Flüchtling notfalls zu erschießen . . ., verstieß offensichtlich gegen das Strafgesetz, nämlich das Tötungsverbot der §§ 112, 113 StGB-DDR“. Das Miß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und politischen Interesses der DDR an der Verhinderung einer unkontrollierten Ausreise ihrer Bürger zu dem Rechtsgut des Lebens sei offensichtlich gewesen; Rechtsblindheit werde auch durch § 258 StGB-DDR nicht privilegiert. Deswegen sei ein Verbotsirrtum (§ 17 StGB) vermeidbar gewesen.

Die Jugendkammer hat bei der Strafbemessung, auch hinsichtlich des Angeklagten W, angenommen, daß die Voraussetzungen des § 213 StGB (minder schwerer Fall des Totschlages) vorliegen.

B.

Die Revision des Angeklagten W beanstandet, das Landgericht habe gegen ein „Bestrafungsverbot“ verstoßen, das aus der „act of state doctrine“ herzuleiten sei; der Angeklagte habe nämlich als Funktionsträger, im Auftrag und im Interesse eines anderen Staates, der DDR, gehandelt und dürfe deswegen nicht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Damit soll ersichtlich ein Verfahrenshindernis geltend gemacht werden. Es besteht nicht.

I.

Die in Staaten des angelsächsischen Rechtskreises in unterschiedlicher Weise formulierte „act of state doctrine“ ist keine allgemeine Regel des Völkerrechts im Sinne des Artikel 25 GG. Sie betrifft vielmehr die Auslegung innerstaatlichen Rechtes, nämlich die Frage, ob und in welchem Maße von der Wirksamkeit der Akte fremder Staaten auszugehen ist (Ipsen, Völkerrecht, 3. Aufl. 1990, S. 335, 619; Verdross/Simma, Universelles Völkerrecht, 3. Aufl. 1984, S. 775; Dahm/Delbrück/Wolfrum, Völkerrecht, 2. Aufl. 1989, S. 487; Kimminich, Völkerrecht, 4. Aufl. 1990, S. 316). Die kontinentaleuropäische, auch die deutsche, Rechtspraxis greift auf diese Doktrin nicht zurück (Dahm/Delbrück/Wolfrum a. a. O. S. 490f.). Hier gibt es keine verbindliche Regel, daß die Wirksamkeit ausländischer Hoheitsakte bei der Anwendung innerstaatlichen Rechtes der gerichtlichen Nachprüfung entzogen sei (vgl. für den Bereich des Strafrechts insbesondere M. Herdegen,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47, 1987, S. 221ff.). Im Einigungsvertrag ist nicht vereinbart worden, daß Akte, die der Staatstätigkeit der DDR zuzuordnen sind, der Nachprüfung durch Ger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zogen sein sollen. Das Gegenteil trifft zu: In den Artikeln 18 und 19 des Einigungsvertrages ist bestimmt, daß Entscheidungen der Gerichte und der Verwaltung der DDR zwar grundsätzlich wirksam bleiben, jedoch aufgehoben werden können, wenn sie mit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nicht zu vereinbaren sind (vgl. auch die

Anlage I zum Einigungsvertrag, Kapitel III, Sachgebiet A, Abschnitt III Nr. 14 d).

II.

Möglicherweise meint die Revision mit ihrem Einwand, Ger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ürften mit Rücksicht auf die Immunität fremder Staaten und ihrer Repräsentanten keine Gerichtsbarkeit ausüben; die Revision beruft sich auf eine zu Immunitätsfragen ergangene Entscheidung des VI. Zivilsenats des Bundesgerichtshofs (NJW 1979, 1101) sowie auf die Entscheidung BGHSt 33, 97, mit der dem Staatsratsvorsitzenden der DDR im Jahre 1984 Immunität zuerkannt worden ist, wie sie einem Staatsoberhaupt zukommt. Die Angeklagten sind schon deswegen nicht als Repräsentanten eines fremden Staates zu behandeln, weil 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nicht mehr besteht.

C.

Die sachlichrechtliche Nachprüfung ergibt, daß die Revisionen der Angeklagten im Ergebnis unbegründet sind.

I.

Die Angeklagten und das Tatopfer hatten zur Tatzeit ihre Lebensgrundlage in der DDR; dort ist das Opfer von den Schüssen der Angeklagten getroffen worden und gestorben. Das Landgericht hat Artikel 315 Abs. 1 EGStGB (i. d. F. des Einigungsvertrages, Anlage I, Kap. III, Sachgebiet C, Abschn. II Nr. 1 b) angewandt und ermittelt, ob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der das Recht der DDR milder im Sinne des § 2 Abs. 3 StGB sei. Dieser Ausgangspunkt entspricht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vgl. BGHSt 37, 320; 38, 1, 3; 38, 18; 38, 88; BGHR StGB § 2 Abs. 3 DDR-StGB 5).

Etwas anderes würde gelten, wenn die Tat schon vor dem 3. Oktober 1990 nach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urteilen gewesen wäre (Artikel 315 Abs. 4 EGStGB i. d. F. des Einigungsvertrages).

1. Der Senat hat die Frage geprüft, ob die in BGHSt 32, 293 im Jahre 1984 entwickelten Grundsätze mit dem Ergebnis anzuwenden sind, daß schon vor der Vereinigung Deutschlands Taten der hier in Rede stehenden Art nach dem Straf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urteilen waren (vgl. Laufhütte in LK, 11. Auflage, vor § 80 Rdn. 35). Er hat die Frage verneint.

Der 3. Strafsenat hatte in der Entscheidung BGHSt 32, 293 im Anschluß an seine Entscheidung BGHSt 30, 1 ausgeführt, das Straf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lte für eine in der damaligen DDR unter Einheimischen durch politische Verdächtigung bewirkte Freiheitsberaubung, und zwar aus folgenden Gründen: Zwar schütze das

Straf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pätestens seit dem Grundlagenvvertrag vom 21. Dezember 1972 (BGBl. 1973 II S. 421) nicht mehr alle in der DDR lebenden Deutschen in dem Sinne, daß die gegen sie auf dem Gebiet der DDR begangenen Taten ohne weiteres nach § 7 Abs. 1 StGB, mithin nach dem Straf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beurteilen seien. Etwas anderes gelte aber jedenfalls für Taten, in denen die mit politischer Verdächtigung oder Verschleppung verbundene Gefahr rechtsstaatswidriger Verfolgung in eine Verletzung, insbesondere in eine Freiheitsberaubung übergehe; der in § 5 Nr. 6 StGB gewährte umfassende Schutz (BGHSt 30, 1) könne nach dem Zweck dieser Vorschrift nicht auf die Ahndung des Gefährdungstatbestandes beschränkt bleiben (BGHSt 32, 293, 298).

Im vorliegenden Fall sind die Regeln des § 5 StGB nicht betroffen; eine Anknüpfung an die Vorschrift des § 5 Nr. 6 StGB ist, anders als in den Fällen BGHSt 30, 1; 32, 293, nicht möglich. Den Schüssen an der Mauer war kein Gefährdungsdelikt vorausgegangen. S ist zwar, ebenso wie die Opfer der in den §§ 234 a, 241 a StGB bezeichneten Straftaten, das Opfer eines Freiheitsrechte mißachtenden politischen Systems geworden. Dieser Gesichtspunkt ist für sich allein aber nicht bestimmt genug, um die gegen ihn begangene Tat im Hinblick auf das Rechtsanwendungsrecht (§§ 3 bis 7 StGB) hinreichend deutlich zu beschreiben und von anderen in der DDR begangenen Taten abzugrenzen, für die die Vorschrift des § 7 Abs. 1 StGB nicht galt.

Hinzu kommt folgende Überlegung: Der Gesetzgeber hat ersichtlich den Meinungsstand hinsichtlich der Anwendung der §§ 3 bis 7 StGB auf DDR-Fälle, insbesondere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gerichtshofs (BGHSt 30, 1; 32, 293), gekannt, als er mit der Neufassung des Artikels 315 EGStGB durch den Einigungsvertrag in das System des Rechtsanwendungsrechts eingriff. Würde die Rechtsprechung, die sich nur noch auf Taten bezieht, die vor dem Inkrafttreten des Einigungsvertrages begangen worden sind, im jetzigen Zeitpunkt wesentlich geändert, so erhielte die Neufassung des Art. 315 EGStGB einen Inhalt, mit dem der Gesetzgeber nicht gerechnet hat. Unter diesen Umständen ist der Anwendungsbereich des Artikels 315 Abs. 4 EGStGB nicht anders zu beurteilen, als es dem gesicherten Stand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entspricht.

2. Aus den gleichen Gründen folgt der Senat nicht dem weitergehenden, in jüngster Zeit wieder aufgegriffenen Vorschlag, Deutsche, die ihren Lebensmittelpunkt in der DDR hatten, ausnahmslos als Deutsche im Sinne des § 7 Abs. 1 StGB aufzufassen (Küpper/Wilms ZRP 1992, 91; Bath Deutschland-Archiv 1990, 1733; im Ergebnis ähnlich Hruschka JZ 1992, 665; aus der Zeit vor 1989 vgl. Oehler JZ 1984, 948; Woesner ZRP 1976, 248 sowie OLG Düsseldorf NJW 1979, 59; 1983, 1277). Daß dem Einigungsvertrag diese Auslegung nicht zugrunde gelegen hat, ergibt sich schon aus der Beobachtung, daß für die Vorschrift des Artikel 315 Abs. 1 EGStGB nur ein sehr geringer Anwendungsbereich (Taten ohne individuelle Opfer sowie

Taten gegen Ausländer) übrig bliebe, wenn alle Taten, die sich gegen DDR-Bürger richteten, unter Artikel 315 Abs. 4 EGStGB fielen; wie die Gesamtheit der in den Artikeln 315 bis 315 c EGStGB i. d. F. des Einigungsvertrages enthaltenen Regelungen zeigt, ist der Gesetzgeber aber ersichtlich davon ausgegangen, daß der Anwendungsbereich des — allerdings an § 2 Abs. 3 StGB zu messenden — DDR-Rechts breit sein werde.

II.

Das Recht der ehemaligen DDR wäre im Sinne des § 2 Abs. 3 StGB (iV mit Artikel 315 Abs. 1 EGStGB idF des Einigungsvertrages) im Vergleich mit dem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as mildere Recht, wenn der abgeurteilte tödliche Schußwaffengebrauch nach dem Recht der DDR (§ 27 Abs. 2 des Grenzgesetzes iV mit § 213 Abs. 3 StGB-DDR) gerechtfertigt gewesen wäre und dieser Rechtfertigungsgrund auch heute zugunsten der Angeklagten beachtet werden müßte. Die Nachprüfung ergibt, daß die Angeklagten zwar — nach der zur Tatzeit in der DDR praktizierten Auslegung — den in § 27 Abs. 2 des Grenzgesetzes bezeichneten Anforderungen entsprechen haben, daß sich daraus jedoch kein wirksamer Rechtfertigungsgrund ergibt.

1. Die Grenztruppen der DDR hatten nach § 18 Abs. 2 des Grenzgesetzes vom 25. März 1982 (GBl. DDR I S. 197) die „Unverletzlichkeit“ der Grenze zu „gewährleisten“; als Verletzung galt u. a. das widerrechtliche Passieren der Grenze (§ 17 Satz 2 Buchst. b des Grenzgesetzes).

Nach § 27 Abs. 2 Satz 1 des Grenzgesetzes war die Anwendung der Schußwaffe „gerechtfertigt, um die unmittelbar bevorstehende Ausführung oder die Fortsetzung einer Straftat zu verhindern, die sich den Umständen nach als ein Verbrechen darstellt“. In § 27 Abs. 5 Satz 1 des Gesetzes hieß es, das Leben von Personen sei bei der Anwendung der Schußwaffe „nach Möglichkeit zu schonen“. Als Verbrechen wurden nach § 1 Abs. 3 Satz 2 StGB-DDR u. a. „gesellschaftsgefährliche“ Straftaten gegen „Rechte und Interessen der Gesellschaft“ verstanden, die eine „schwerwiegende Mißacht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darstellen und . . . für die innerhalb des vorgesehenen Strafrahmens im Einzelfall eine Freiheitsstrafe von über zwei Jahren ausgesprochen wird“. Mit einer solchen Strafe, nämlich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Jahr bis zu acht Jahren, war der ungesetzliche Grenzübertritt in schweren Fällen bedroht (§ 213 Abs. 3 StGB-DDR idF des 3. Strafrechtsänderungsgesetzes vom 28. Juni 1979, GBl. DDR I S. 139). Ein schwerer Fall lag nach § 213 Abs. 3 Satz 2 Nr. 2 StGB-DDR „insbesondere“ vor, wenn die Tat mit „gefährlichen Mitteln oder Methoden“ durchgeführt wurde. Daß die Praxis der DDR zur Tatzeit die „Republikflucht“ mit unmittelbarem Grenzkontakt in den meisten Fällen als Verbrechen wertete und mit Freiheitsstrafen von mehr als zwei Jahren ahndete, hat der Tatrichter unterstellt (UA S. 11). Dem entspricht es, daß das Oberste Gericht der DDR und der Generalstaatsanwalt der DDR am

15. Januar 1988 in ihrem „Gemeinsamen Standpunkt zur Anwendung des § 213 StGB“ ausgeführt haben, eine gefährliche Methode im Sinne des § 213 Abs. 3 Satz 2 Nr. 2 StGB sei u. a. das Benutzen von „Steighilfen zur Überwindung von Grenzsicherungsanlagen“ (OG-Informationen 2/1988 S. 9, 14); bereits am 17. Oktober 1980 war ein „Gemeinsamer Standpunkt“ des Obersten Gerichtes und des Generalstaatsanwalts mit entsprechendem Inhalt formuliert worden (OG-Informationen — Sonderdruck 1980 S. 3; vgl. auch UA S. 49).

Nach dem vom Ministerium der Justiz und der Akademie für Staats- und Rechtswissenschaft der DDR herausgegebenen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Straf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5. Aufl. 1987 — fortan als „DDR-Kommentar“ zitiert —, § 213 Anm. 16) fiel das Verhalten des Tatopfers auch unter § 213 Abs. 3 Satz 2 Nr. 5 StGB-DDR: S hatte bis zum Übersteigen der Hinterlandmauer gemeinschaftlich mit einem anderen gehandelt (UA S. 15); dessen Rücktritt vom Versuch des unerlaubten Grenzübertritts bewirkte nicht, daß für S die Voraussetzungen des § 213 Abs. 3 Satz 2 Nr. 5 StGB-DDR (Begehung der Tat „zusammen mit anderen“) wegfielen (DDR-Kommentar a. a. O.).

2. Entgegen der Auffassung der Jugendkammer kommt eine Auslegung dieser Vorschriften in dem Sinne in Betracht, daß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von ihnen gedeckt war.

a) Der Wortsinn des § 27 des Grenzgesetzes läßt eine solche Auslegung zu: Der Grenzübertritt, der in Anwendung des § 213 Abs. 3 StGB-DDR als Verbrechen angesehen wurde, sollte, sofern er unmittelbar bevorstand, durch Anwendung der Schußwaffe „verhindert“ werden (§ 27 Abs. 2 Satz 1 des Grenzgesetzes). Zwar bezeichnete das Gesetz die Anwendung der Schußwaffe als „äußerste Maßnahme“ (§ 27 Abs. 1 Satz 1 des Grenzgesetzes); andere Mittel, den Grenzübertritt zu verhindern, standen den Angeklagten aber nicht zur Verfügung. Nach § 27 Abs. 5 des Grenzgesetzes war das Leben anderer „nach Möglichkeit“, also nicht in jedem Falle zu schonen. Hiernach läßt der Wortlaut des Gesetzes die Auslegung zu, daß auch mit (jedenfalls bedingtem) Tötungsvorsatz geschossen werden durfte, wenn das Ziel, Grenzverletzungen zu verhindern, nicht auf andere Weise erreicht werden konnte.

Voraussetzung für diese Auslegung des § 27 des Grenzgesetzes ist allerdings, daß das Ziel, Grenzverletzungen zu verhindern, im Konfliktfalle Vorrang vor der Schonung menschlichen Lebens hatte. Wie die Abwägung zwischen dem Leben des Flüchtlings und der „Unverletzlichkeit der Staatsgrenze“ auszufallen hatte, war aus dem Gesetz nicht abzulesen. Rechtsprechung von Gerichten der DDR ist zu dieser Frage nicht veröffentlicht worden. Äußerungen im Schrifttum der DDR zum Schußwaffengebrauch an der Grenze beschränken sich auf die Darlegung, daß die Bestimmungen über den Schußwaffengebrauch den westdeutschen Vorschriften entsprächen (Kaul/Graefrath NJ 1964, 272,

273) und im Einklang mit dem Völkerrecht dem Schutz der nationalen Sicherheit und öffentlichen Ordnung dienten (Buchholz/Wieland NJ 1977, 22, 26); diese Äußerungen stammen aus der Zeit vor dem Inkrafttreten des Grenzgesetzes. Unter diesen Umständen sind die vom Tatrichter festgestellte Befehlslage und die — ebenfalls auf vorgegebenen Befehlen beruhenden — Begleitumstände des Tatgeschehens heranzuziehen, um zu ermitteln, wie die Vorschrift des § 27 des Grenzgesetzes zur Tatzeit von den für ihre Anwendung und Auslegung Verantwortlichen verstanden worden ist.

aa) Die Befehlslage schloß „zur Vereitelung der Flucht auch die bewußte Tötung des Flüchtenden“ ein (UA S. 17), falls mildere Mittel zur Fluchtverhinderung nicht ausreichten (UA S. 22). Daß der Flüchtende den Westteil von Berlin erreichte, war danach „auf jeden Fall und letztlich mit allen Mitteln zu verhindern“ (UA S. 12). In der regelmäßig wiederkehrenden Vergatterung war nach den Feststellungen der „Kernsatz“ enthalten: „Grenzdurchbrüche sind auf keinen Fall zuzulassen. Grenzverletzer sind zu stellen oder zu vernichten“ (UA S. 12). Bei der Schulung der Grenzsoldaten galt als Faustregel: „Besser der Flüchtling ist tot, als daß die Flucht gelingt“ (UA S. 13). Das Interesse, die Flucht zu verhindern, hatte hiernach Vorrang vor dem Leben des Flüchtlings. Eine gelungene Flucht war „das Schlimmste, was der Kompanie passieren konnte, da sie der ihr gestellten Aufgabe nicht gerecht geworden wäre“ (UA S. 13). Die Erschießung eines Flüchtlings an der Mauer hatte dagegen „keine negativen Konsequenzen“; sie hat nie zu einem Verfahren gegen den Schützen geführt (UA S. 13, 28f.). Vielmehr wurde der Posten, der eine Flucht, wie auch immer, verhindert hatte, ausgezeichnet und belohnt (UA S. 13). Der Tatrichter hat keinerlei Anhaltspunkte dafür gefunden, daß Gerichte, Staatsanwaltschaften oder andere staatliche Instanzen der DDR jemals beanstandet hätten, der durch die Befehlslage bezeichnete Schußwaffengebrauch überschreite die in § 27 des Grenzgesetzes gesteckten Grenzen (UA S. 28f.).

bb) Daß der Schutz des Lebens von „Grenzverletzern“ hinter andere Ziele, auch das Ziel der Geheimhaltung schwerer Verletzungen, zurücktrat, zeigen auch die folgenden Feststellungen des Tatrichters:

Obwohl § 27 Abs. 5 des Grenzgesetzes vorschrieb, das Leben von Personen nach Möglichkeit zu schonen und unter Beachtung der notwendigen Sicherheitsmaßnahmen Erste Hilfe zu gewähren, hat keiner der nach den Schüssen der Angeklagten hinzugekommenen Angehörigen der Grenztruppen und anderer Einheiten S geholfen, obwohl dieser mehrfach darum bat. Der Verletzte wurde zu einem Turm „ge-

schleift“ und dort an einer vom Westen nicht einsehbaren Stelle „abgelegt“. S ist nicht mit dem gewöhnlichen Krankenwagen der „Schnellen medizinischen Hilfe“, sondern mit einem Sanitätswagen des Regiments, der zunächst 45 Minuten für die Anfahrt benötigt hatte, abtransportiert worden, und zwar nicht zum nächstgelegenen Krankenhaus, sondern zu dem entfernteren Krankenhaus der Volkspolizei, wo er mehr als zwei Stunden nach den Verletzungen eingeliefert wurde. In dem Sanitätswagen war kein Arzt, weil bei der Anforderung des Wagens nicht mitgeteilt werden durfte, daß jemand schwer verletzt worden war. Bei schneller ärztlicher Hilfeleistung hätte S gerettet werden können. Die genannten Maßnahmen, die eine erhebliche Verzögerung bewirkten, entsprachen der Befehlslage, die vorrangig nicht an der Lebensrettung, sondern an dem Interesse orientiert war, daß der Vorfall auf beiden Seiten der Grenze unerkannt blieb; möglicherweise galt diese Geheimhaltung als „notwendige Sicherheitsmaßnahme“ im Sinne des § 27 Abs. 5 Satz 2 des Grenzgesetzes. Dem Vorrang der Geheimhaltung vor der Lebensrettung entsprach es, daß die Sanitäter die Fahrt nicht ihrem Regimentsarzt melden durften, daß der Zugführer unterschreiben mußte, der Nachtdienst sei ohne besondere Vorkommnisse verlaufen, und daß der Name des Opfers im Eingangsbuch des Krankenhauses sowie auf dem Totenschein nicht genannt wurde; auch wurde der Vater des Opfers erst am 4. Dezember 1984 vom Tod seines Sohnes unterrichtet.

Ein Hinweis auf die Bedeutung politischer Interessen ergibt sich auch daraus, daß der Befehl, an der Grenze zu schießen, anläßlich von Staatsbesuchen, Parteitagungen und FDJ-Treffen auf Fälle der Notwehr, der Verwendung „schwerer Technik“ und der Fahnenflucht beschränkt wurde. Gleichzeitig wurde die Postendichte verstärkt.

- cc) Die genannten tatsächlichen Umstände ergeben in ihrer Gesamtheit, daß die Verhinderung des Grenzübertretts als überragendes Interesse aufgefaßt wurde, hinter das persönliche Rechtsgüter einschließlich des Lebens zurücktraten. Der Senat gelangt deswegen zu dem Ergebnis, daß nach der zur Tatzeit in der DDR geübten Staatspraxis die Anwendung von Dauerfeuer ohne vorgeschaltetes, auf die Beine gerichtetes Einzelfeuer nicht als rechtswidrig angesehen worden wäre. Denn die Angeklagten haben mit dem Dauerfeuer die Chance, die Flucht zu verhindern, freilich auch das Risiko eines tödlichen Treffers, erhöht und damit dem entsprochen, was ihnen im Einklang mit der herrschenden Auslegung des Grenzgesetzes als das wichtigste Ziel vermittelt wurde, nämlich die Verhinderung von Grenzübertritten. Sie hätten sich nach den genannten

Beurteilungsmaßstäben allenfalls dann einer auf § 27 Abs. 5 Satz 1 des Grenzgesetzes gestützten Kritik ausgesetzt, wenn eine hohe Wahrscheinlichkeit dafür gesprochen hätte, daß das Einzelfeuer auf die Beine die Flucht zuverlässig verhindert hätte. Das liegt hier angesichts der zeitlichen Verhältnisse fern: S befand sich, als die Angeklagten schossen, im zügigen Aufstieg auf der Leiter. Er hat fünf Sekunden bis zum Erreichen einer Höhe benötigt, aus der er an die Mauerkrone greifen konnte. Es muß angenommen werden, daß er zu diesem Zeitpunkt in der Lage war, innerhalb weniger Sekunden die Mauerkrone zu übersteigen und sich dadurch in Sicherheit zu bringen. Bei der Abgabe von Einzelfeuer betrug nach den Feststellungen der Mindestabstand zwischen zwei Schüssen 1,5 Sekunden; angesichts der Kürze der für die Fluchtverhinderung verbliebenen Zeit war hiernach die Chance, dieses Ziel zu erreichen, bei Dauerfeuer (mit einer Frequenz von 10 Schüssen je Sekunde) wesentlich höher. Im übrigen ist auch zu berücksichtigen, daß die Entfernung der Schützen von S nicht unbeträchtlich war und daß sich die Ereignisse zur Nachtzeit zutrugen.

- dd) Hiernach entsprach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der rechtfertigenden Vorschrift des § 27 Abs. 2 des Grenzgesetzes, so wie sie in der Staatspraxis angewandt wurde. Diese Staatspraxis ist durch den Vorrang der Fluchtverhinderung vor dem Lebensschutz gekennzeichnet; die zur Rechtskontrolle berufenen Gerichte und Behörden der DDR haben dieser Staatspraxis nicht widersprochen. Sofern man das darin zum Ausdruck gekommene Verständnis des § 27 Abs. 2 des Grenzgesetzes zugrunde legt, waren die mit bedingtem Vorsatz und Dauerfeuer abgegebenen Schüsse der Angeklagten gerechtfertigt.

In dieser Betrachtungsweise weicht der Senat vom Vorgehen der Jugendkammer ab. Diese hat das Grenzgesetz wegen des von ihm erweckten „Anscheins von Rechtsstaatlichkeit“ nach rechtsstaatlichen Maßstäben, insbesondere im Lichte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ausgelegt (UA S. 51); sie ist der Auffassung, daß staatliche Präventionszwecke niemals die vorsätzliche, auch nicht die bedingt vorsätzliche Tötung eines Menschen, der das Leben anderer nicht gefährdet, rechtfertigten, weil das Leben das höchste Rechtsgut sei (UA S. 53). Nach Ansicht der Jugendkammer rechtfertigt § 27 Abs. 2 des Grenzgesetzes die (unbedingt oder bedingt) vorsätzliche Tötung auch dann nicht, wenn die in § 27 des Grenzgesetzes umschriebenen staatlichen Zwecke anders nicht zu erreichen wären (UA S. 54). Diese Rechtsauffassung der Jugendkammer ist dem Grundgesetz und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

vention verpflichtet. Sie wäre deshalb ein geeigneter Ausgangspunkt für die Auslegung des § 11 UZwG sowie des § 16 UZwGBw. Hier geht es indessen nicht um die Auslegung dieser Vorschriften, sondern im Hinblick auf § 2 Abs. 3 StGB um die Prüfung, ob als milderes Gesetz ein Rechtfertigungsgrund nach dem zur Tatzeit geltenden fremden Recht in Betracht kommt.

- b) Von der Frage, ob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nach dem Recht der DDR, wie es in der Staatspraxis angewandt wurde, gerechtfertigt war, ist die andere Frage zu unterscheiden, ob ein so verstandener Rechtfertigungsgrund (§ 27 Abs. 2 des Grenzgesetzes) wegen Verletzung vorgeordneter, auch von der DDR zu beachtender allgemeiner Rechtsprinzipien und wegen eines extremen Verstoßes gege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bei der Rechtsfindung außer Betracht bleiben muß, und zwar auch dann, wenn die Prüfung des fremden Rechtfertigungsgrundes im Rahmen des § 2 Abs. 3 StGB stattfindet. Der Senat bejaht diese Frage.

Der in § 27 Abs. 2 des Grenzgesetzes genannte Rechtfertigungsgrund, wie ihn die damalige Staatspraxis, vermittelt durch die Befehlslage, handhabte, hat, sofern der Grenzübergang auf andere Weise nicht verhindert werden konnte, das (bedingt oder unbedingt) vorsätzliche Töten von Personen gedeckt, die nichts weiter wollten, als unbewaffnet und ohne Gefährdung allgemein anerkannter Rechtsgüter die Grenze zu überschreiten. Die Durchsetzung des Verbots, die Grenze ohne besondere Erlaubnis zu überschreiten, hatte hiernach Vorrang vor dem Lebensrecht von Menschen. Unter diesen besonderen Umständen ist der Rechtfertigungsgrund, wie er sich in der Staatspraxis darstellte, bei der Rechtsanwendung nicht zu beachten.

- aa) Allerdings müssen Fälle, in denen ein zur Tatzeit angenommener Rechtfertigungsgrund als unbeachtlich angesehen wird, auf extreme Ausnahmen beschränkt bleiben.

Daß ein Rechtfertigungsgrund gegen den ordre public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gl. Art. 6 EGBGB) verstoßen hat, ist — entgegen Küpper/Wilms ZRP 1992, 91, 93 — für sich allein kein ausreichender Grund, ihm bei der Aburteilung einer unter dem früheren Recht begangenen Tat die Berücksichtigung zu versagen. Das Landgericht hat mit Recht auf die hohe Bedeutung der Rechtssicherheit hingewiesen. Sie spricht dafür, in den Fällen des § 2 Abs. 3 StGB bei der Ermittlung des milderen Rechtes grundsätzlich die Rechtfertigungsgründe des früheren Rechtes mit zu berücksichtigen.

- bb) Ein zur Tatzeit angenommener Rechtfertigungsgrund kann vielmehr nur dann wegen Verstoßes gegen höherrangiges Recht unbeachtet bleiben, wenn in ihm ein offensichtlich grober Verstoß gegen Grundgedanken der Gerechtigkeit und Menschlich-

keit zum Ausdruck kommt; der Verstoß muß so schwer wiegen, daß er die allen Völkern gemeinsamen, auf Wert und Würde des Menschen bezogenen Rechtsüberzeugungen verletzt (BGHSt 2, 234, 239). Der Widerspruch des positiven Gesetzes zur Gerechtigkeit muß so unerträglich sein, daß das Gesetz als unrichtiges Recht der Gerechtigkeit zu weichen hat (Radbruch SJZ 1946, 105, 107). Mit diesen Formulierungen (vgl. auch BVerfGE 3, 225, 232; 6, 132, 198f) ist nach dem Ende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herrschaft versucht worden, schwerste Rechtsverletzungen zu kennzeichnen. Die Übertragung dieser Gesichtspunkte auf den vorliegenden Fall ist nicht einfach, weil die Tötung von Mensch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nicht mit dem nationalsozialistischen Massenmord gleichgesetzt werden kann. Gleichwohl bleibt die damals gewonnene Einsicht gültig, daß bei der Beurteilung von Taten, die in staatlichem Auftrag begangen worden sind, darauf zu achten ist, ob der Staat die äußerste Grenze überschritten hat, die ihm nach allgemeiner Überzeugung in jedem Lande gesetzt ist.

- cc) Heute sind konkretere Prüfungsmaßstäbe hinzugekommen: Die internationalen Menschenrechtspakte bieten Anhaltspunkte dafür, wann der Staat nach der Überzeugung der weltweiten Rechtsgemeinschaft Menschenrechte verletzt. Hierbei ist der Internationale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vom 19. Dezember 1966 (BGBl. II 1973 S. 1534 — IPbüRG —) von besonderer Bedeutung. Die DDR ist ihm im Jahre 1974 beigetreten (GBl. DDR II S. 57); sie hat die Ratifizierungsurkunde am 8. November 1974 hinterlegt (GBl. a. a. O.). Der Internationale Pakt (im Sprachgebrauch der DDR „Konvention über zivile und politische Rechte“ genannt) ist für beide deutsche Staaten am 23. März 1976 in Kraft getreten (BGBl. II S. 1068; GBl. DDR II S. 108). Allerdings hat die DDR es unterlassen, den Pakt gemäß Art. 51 der DDR-Verfassung zum Anlaß für innerstaatliche Gesetzesänderungen zu nehmen und bei dieser Gelegenheit nach der genannten Verfassungsvorschrift von der Volkskammer „bestätigen“ zu lassen. An der völkerrechtlichen Bindung der DDR ändert dieser Sachverhalt nichts. Ein Staat kann sich „nicht durch eine Berufung auf seine innerstaatliche Rechtsordnung der Erfüllung von ihm eingegangener Verpflichtungen entziehen“ (Völkerrecht, Lehrbuch, Berlin-Ost 1981, I S. 59); er ist „kraft Völkerrechts verpflichtet, im Bereich seiner innerstaatlichen Gesetzgebung entsprechend diesen Verpflichtungen zu handeln und sie zu erfüllen“ (a. a. O.). Ergeben sich bei der Bewertung des Rechts der DDR Widersprüche zwischen den von ihr völkerrechtlich anerkannten Menschenrechten und der tatsächlichen Anwendung der Grenz- und Waffengebrauchsvorschriften, so

kann dieser Widerspruch auch bei der Beurteilung der Frage berücksichtigt werden, ob derjenige rechtswidrig handelt, der auf staatlichen Befehl Menschenrechte verletzt, die durch den völkerrechtlichen Vertrag geschützt sind. Deswegen kann die Frage offenbleiben, ob entgegen der in der DDR vertretenen Auffassung (Buchholz/Wieland NJ 1977, 22, 26; vgl. auch Graefrath, Menschenrechte und internationale Kooperation, Berlin-Ost 1988, S. 55ff. sowie R. Hofmann, Die Ausreisefreiheit nach Völkerrecht und staatlichem Recht, Berlin-West 1988, S. 243ff.) aus dem besonderen Inhalt des IP-bürgR abzuleiten ist, daß schon die Ratifikation den Menschen in den Vertragsstaaten eine Rechtsposition gegenüber ihrem Staat verschafft hat (vgl. Tomuschat, Vereinte Nationen 1976 H. 6, S. 166ff.; Buergenthal in: Henkin [Hrsg.],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1981, S. 72ff.).

(1) Artikel 12 Abs. 2 IPbürgR lautet: „Jedermann steht es frei, jedes Land, einschließlich seines eigenen, zu verlassen“ (Übersetzung im DDR-Gesetzblatt: „Es steht jedem frei, jedes Land, auch sein eigenes, zu verlassen“). Nach Artikel 12 Abs. 3 IPbürgR darf dieses Recht nur durch Gesetz und nur zu bestimmten Zwecken, darunter zum Schutz der nationalen Sicherheit und der öffentlichen Ordnung, eingeschränkt werden.

Das Erfordernis, daß die Einschränkung durch Gesetz erfolgen muß, hat das Paßgesetz der DDR vom 28. Juni 1979 (GBl. DDR I S. 148) erfüllt. Darauf, daß die im Paßgesetz und in den zugehörigen Anordnungen enthaltenen Beschränkungen dem Schutz der öffentlichen Ordnung dienen, hat sich die DDR stets berufen. Doch ergibt sich aus dem verbindlichen englischen Wortlaut des Artikels 12 Abs. 3 IPbürgR („The . . .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strictions except . . .“) und der Entstehungsgeschichte sowie der internationalen Auslegung der Vorschrift, daß mit dem Gesichtspunkt der öffentlichen Ordnung (*ordre public*) nicht etwa ein umfassender Gesetzesvorbehalt gemeint war; vielmehr sollten die Einschränkungen auf Ausnahmefälle beschränkt bleiben und keinesfalls die Substanz der Freizügigkeit und des Ausreiserechts zerstören (Nowak, UNO-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1989, Artikel 12 Rdn. 23, 32f.; Jagerskiold in: Henkin [Hrsg.],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1981 S. 166, 172, 179; R. Hofmann, Die Ausreisefreiheit nach Völkerrecht und staatlichem Recht, 1988, S. 123, 251; Polakiewicz EuGRZ 1992, 177, 186; Hannum, The Right to leave and return in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1987, S. 52f.; Empfehlungen der internationalen Konferenzen von Uppsala [1972] und Syrakus [1984], mitgeteilt bei Hannum a. a. O. S. 150f., 22;

Reinke,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24, 1986, S. 647, 665). Gesichtspunkte des wirtschaftlichen oder sozialen Wohls sollten, wie die Materialien ergeben, kein zulässiges Motiv für die Einschränkung der Freizügigkeit sein (R. Hofmann a. a. O. S. 43; Nowak a. a. O. Rdn. 37, Fn. 86; Bossuyt, Guide to the Travaux Préparatoires of the ICCPR 1987 S. 255).

Die DDR ist in den Jahren 1977 und 1984 vom Menschenrechtsausschuß der Vereinten Nationen zu den Verhältniss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gehört worden. Sie hat 1977 erklärt, die Einschränkung der Freizügigkeit entspreche dem IPbürgR (vgl. Bruns Deutschland-Archiv 1978, 848, 851; UNO-Dokument A 33/Suppl. 40 [1978], S. 26ff., 29). In ihrem Bericht für die Vereinten Nationen von 1984 hat sich die DDR auf die große Zahl erlaubter Ausreisen berufen und betont, die Beschränkungen dienten dem Schutz der nationalen Sicherheit und öffentlichen Ordnung (vgl. Bruns Deutschland-Archiv 1984 S. 1183, 1185; R. Hofmann a. a. O. S. 117ff., 251). In der mündlichen Befragung hat damals der Vertreter der DDR behauptet, das Grenzgesetz von 1982 sei mit dem IPbürgR, auch mit dessen Artikel 6 (Recht auf Leben), vereinbar; Grenzsoldaten schossen nur im äußersten Notfall, wenn andere Mittel nicht ausreichten, um ein Verbrechen — erwähnt wurde der Fall der Gewalttat (*violence*) — zu verhindern (R. Hofmann a. a. O. S. 121; vgl. Bruns a. a. O. 1984, 1186).

Es ist zwar nicht anzunehmen, daß der Inhalt des Artikels 12 IPbürgR zu den „allgemein anerkannten, dem friedlichen Zusammenleben und der Zusammenarbeit der Völker dienenden Regeln des Völkerrechts“ im Sinne des Artikels 8 der DDR-Verfassung gezählt wurde; Artikel 8 dieser Verfassung bezog sich ersichtlich auf einen engeren Ausschnitt aus dem Völkerrecht, der die Zusammenarbeit und Koexistenz verschiedener Staaten betraf (vgl. Sorgenicht u. a., Verfassung der DDR, 1969, Artikel 8 Anm. 1; siehe auch Mampel,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der DDR, 2. Aufl. 1982, Art. 8 Rdn. 2). Die dem Artikel 12 IPbürgR entsprechenden Regeln gehören aber zu den Werten, die das Verhältnis des Staates zu seinen Bürgern bestimmen und deswegen bei der Auslegung von Gesetzen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2) Das in Artikel 12 IPbürgR bezeichnete Menschenrecht auf Ausreisefreiheit wurde durch das Grenzregime der DDR verletzt, weil den Bewohnern der DDR das Recht auf freie Ausreise nicht nur in Ausnahmefällen, sondern in aller Regel vorenthalten wurde.

Nach den Vorschriften des DDR-Rechts über die Ausgabe von Pässen als Vorausset-

zung für das legale Überschreiten der deutsch-deutschen Grenze (Paßgesetz und Paß- und Visaanordnung vom 28. Juni 1979 — GBl. DDR I, 148, 151 —, ergänzt durch die Anordnung vom 15. Februar 1982 — GBl. DDR I, 187 —) gab es, jedenfalls bis zum 1. Januar 1989 (Inkrafttreten der VO vom 30. November 1988, GBl. DDR I, 271), für nicht politisch privilegierte Bürger unterhalb des Rentenalters, abgesehen von einzelnen dringenden Familienangelegenheiten, keine Möglichkeit der legalen Ausreise; Entscheidungen über Anträge auf Ausreise bedurften bis zum 1. Januar 1989 nach § 17 der Anordnung vom 28. Juni 1979 (GBl. DDR I, S. 151) keiner Begründung und konnten bis zu diesem Zeitpunkt (§ 23 der VO vom 30. November 1988) nicht mit der Beschwerde angefochten werden.

Diese Regelung verstieß gegen die Einschränkungskriterien des Artikels 12 Abs. 3 IPbürgR, gegen den Grundsatz, daß Einschränkungen die Ausnahme bleiben sollten, und gegen das allenthalben aufgestellte Prinzip, daß die Versagung der Ausreise mit Rechtsbehelfen anfechtbar sein müsse (Hannum a. a. O. S. 148). Der Senat übersieht nicht, daß auch andere Länder die Ausreise ihrer eigenen Bürger beschränken, daß die Ausreisefreiheit bei der Schaffung des Grundgesetzes nicht zu einem selbständigen Grundrecht gemacht worden ist (vgl. Pieroth JuS 1985, 81, 84; Rittstieg AK, 2. Aufl., Art. 11 GG, Rdn. 1 ff., 37) und daß dies damals auch mit der Besorgnis begründet wurde, die arbeitsfähigen Jahrgänge würden in unerwünschtem Maße auswandern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es der Gegenwart, Neue Folge, Bd. 1, 1951 S. 44). Ihm ist auch bewußt, daß es in den Vereinten Nationen Meinungsunterschiede zwischen Entwicklungsländern, die das Abwandern der Intelligenz verhüten wollen, und den westeuropäischen Mitgliedsstaaten gibt, die auf eine möglichst unbeschränkte Ausreisefreiheit dringen (Hannum a. a. O. S. 31, 52, 55, 109 ff.); und daß zur Tatzeit in den unter sowjetischem Einfluß stehenden Staaten durchweg Ausreisebeschränkungen bestanden (vgl. R. Hofmann a. a. O. S. 239 ff.; Hannum a. a. O. S. 96 ff.; G. Brunner in: Menschenrechte in den Staaten des Warschauer Pakts, Bericht der Unabhängigen Wissenschaftlerkommission, 1988, S. 165 ff.; Kuss EuGRZ 1987, 305).

Das Grenzregime der DDR empfindet jedoch seine besondere Härte dadurch, daß Deutsche aus der DDR ein besonderes Motiv für den Wunsch, die Grenze nach West-Berlin und Westdeutschland zu überqueren, hatten: Sie gehörten mit den Menschen auf der anderen Seite der Grenze zu einer Nation und waren mit ihnen durch vielfältige verwandtschaftliche und sonstige persönliche Beziehungen verbunden.

(3) Insbesondere kann die durch die restriktiven Paß- und Ausreisevorschriften begründete Lage unter dem Gesichtspunkt der Menschenrechte nicht ohne Beachtung der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an der Grenze gewürdigt werden, die durch „Mauer, Stacheldraht, Todesstreifen und Schießbefehl“ (BVerfGE 36, 1, 35) gekennzeichnet waren und damit gegen Artikel 6 IPbürgR verstießen. Nach dieser Vorschrift hat „jeder Mensch ein angeborenes Recht auf Leben“; „niemand darf willkürlich seines Lebens beraubt werden“ (Artikel 6 Abs. 1 Satz 1 und 3). Auch wenn die Auslegung des Merkmals „willkürlich“ insgesamt bisher nicht sehr ergiebig gewesen ist (vgl. Nowak a. a. O. Artikel 6 Rdn. 12 ff.; Nowak EuGRZ 1983, 11, 12; Polakiewicz EuGRZ 1992, 177, 182; Ramcharan, Netherlands Internat. Law Review 30, 1983, 297, 316 ff.; Boyle in: Ramcharan [Hrsg.], The Right to Life in International Law, 1985, S. 221 ff.), so zeichnet sich doch, auch in der Rechtsprechung anderer Staaten (vgl. insbesondere US Supreme Court 471 US 1 in der Sache Tennessee v. Garner, 1985), die Tendenz ab, den mit der Möglichkeit tödlicher Wirkung verbundenen Schußwaffengebrauch von Staatsorganen unter starker Beton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auf Fälle einzugrenzen, in denen eine Gefährdung von Leib und Leben anderer zu befürchten ist (Boyle a. a. O. S. 241 f.; Desch, Österr. Zeitschr. f. öff. Recht u. Völkerrecht 36, 1985, S. 77, 102; Ramcharan a. a. O. [1983] S. 318). In der „Allgemeinen Bemerkung“ des Menschenrechtsausschusses der Vereinten Nationen zum Recht auf Leben aus dem Jahre 1982 (General Comment 6/16 — A/37/40, S. 93 ff. —, abgedruckt bei Nowak, UNO-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1989], S. 879 sowie bei Graefrath, Menschenrechte und internationale Kooperation [1988], S. 263) heißt es, der Schutz des Lebens vor willkürlicher Tötung sei von überragender Bedeutung; das Gesetz müsse die Umstände, unter denen staatliche Organe jemanden seines Lebens berauben dürfen, „strikt kontrollieren und begrenzen“ (a. a. O. Abschnitt 3).

Die Grenze zur Willkür ist nach der Auffassung des Senats insbesondere überschritten, wenn der Schußwaffengebrauch an der Grenze dem Zweck dient, Dritte vom unerlaubten Grenzübertritt abzuschrecken. Daß die „Befehlslage“, die die vorsätzliche Tötung von „Grenzverletzern“ einschloß, auch dieses Ziel hatte, liegt auf der Hand.

Im vorliegenden Fall ergibt sich bei gleichzeitiger Verletzung der Artikel 6 und 12 IPbürgR eine Menschenrechtsverletzung ferner daraus, daß das Grenzregime in seiner beispiellosen Perfektion und dem durch § 27 des Grenzgesetzes iV mit § 213 Abs. 3 StGB-DDR bestimmten, in der Praxis rück-

sichtslos angewandten Schußwaffengebrauch Menschen betraf, denen aufgrund einer die Ausreise regelmäßig und ohne Begründung versagenden Verwaltungspraxis verwehrt wurde, aus der DDR in den westlichen Teil Deutschlands und insbesondere Berlins zu reisen.

- (4) Der Senat nimmt, was das Recht auf Leben angeht, die von der Revision des Angeklagten W gemachten kritischen Hinweise auf die Auslegung des § 11 UZwG sowie der §§ 15, 16 UZwGBw (ebenso Polakiewicz EuGRZ 1992, 177, 185) ernst. Er findet es befremdlich, daß im Schrifttum bei der Auslegung des § 16 UZwGBw ein bedingter Tötungsvorsatz als von der Vorschrift gedeckt bezeichnet worden ist (Jess/Mann, UZwGBw, 2. Aufl. 1981, § 16 Rdn. 4), und pflichtet Frowein (in: Kritik und Vertrauen, Festschrift für Peter Schneider, 1990 S. 112 ff.) darin bei, daß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Schußwaffengebrauch gegen Menschen angesichts seiner unkontrollierbaren Gefährlichkeit (vgl. dazu BGHSt 35, 379, 386) auch im Grenzgebiet (§ 11 UZwG) auf die Verteidigung von Menschen beschränkt werden sollte (a. a. O. S. 117), also auf Fälle, in denen von demjenigen, auf den geschossen wird, eine Gefährdung von Leib oder Leben anderer zu befürchten ist. Der Umstand, daß die derzeitige Auslegung der Schußwaffenvorschriften des geltenden Rechts im Lichte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nicht in jeder Weise befriedigend ist (vgl. auch BGHSt 26, 99), rechtfertigt indes kein Verständnis für den Schußwaffengebrauch durch die Grenztruppen der DDR; dieser war durch eine Konstellation gekennzeichnet, di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esichts ihrer offenen Grenzen keine Parallele hat.
- dd) Die Verletzung der in den Artikeln 6 und 12 des Internationalen Pakts garantierten Menschenrechte in ihrem spezifischen, durch die Verhältnisse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gekennzeichneten Zusammenhang macht es dem Senat unmöglich, bei der Rechtsanwendung die Vorschriften des § 27 des Grenzgesetzes sowie des § 213 Abs. 3 StGB-DDR in dem Umfang, wie sie in der Staatspraxis der DDR verstanden worden sind, als Rechtfertigungsgrund zugrunde zu legen. Die Verhältnisse an der Grenze waren auch unter Berücksichtigung de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Nachteile, die für den betroffenen Staat mit einer starken Abwanderung arbeitsfähiger Menschen verbunden sein können, Ausdruck einer Einstellung, die das Lebensrecht der Menschen niedriger einschätzt als das Interesse, sie am Verlassen des Staates zu hindern. Der im DDR-Recht vorgezeichnete Rechtfertigungsgrund hat deswegen von Anfang an in der Auslegung, die durch die tatsächlichen Verhältnisse an der Grenze

gekennzeichnet war, keine Wirksamkeit gehabt. Er hat bei der Suche nach dem milderen Recht (§ 2 Abs. 3 StGB i. V. mit Artikel 315 Abs. 1 EGVStGB) außer Betracht zu bleiben, weil bereits die DDR bei Zugrundelegung der von ihr anerkannten Prinzipien den Rechtfertigungsgrund hätte einschränkend auslegen müssen.

3. Der Senat hatte sodann der Frage nachzugehen, ob § 27 des Grenzgesetzes mit Auslegungsmethoden, die dem Recht der DDR eigentümlich waren, so hätte ausgelegt werden können, daß die genannt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vermieden wurden; ein so eingegrenzter Rechtfertigungsgrund wäre mit Rücksicht auf Artikel 103 Abs. 2 GG zu beachten. Die Prüfung ergibt, daß eine solche Auslegung möglich gewesen wäre, daß der so bestimmte Rechtfertigungsgrund jedoch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Dauerfeuer mit bedingtem Tötungsvorsatz) nicht gedeckt hätte.
- a) Der Senat legt bei dieser Auslegung nicht die Wertordnung des Grundgesetzes oder der MRK zugrunde; er beschränkt sich darauf, die Vorgaben zu berücksichtigen, die im Recht der DDR für eine menschenrechtsfreundliche Gesetzesauslegung angelegt waren. Ausgangspunkt ist Artikel 89 Abs. 2 der Verfassung der DDR; danach durften Rechtsvorschriften der Verfassung nicht widersprechen. Nach Artikel 30 der Verfassung waren Persönlichkeit und Freiheit eines jeden Bürgers der DDR unantastbar und Einschränkungen nur dann zulässig, wenn sie im Zusammenhang mit strafbaren Handlungen oder einer Heilbehandlung gesetzlich begründet waren; Rechte durften „nur insoweit eingeschränkt werden, als dies gesetzlich zulässig und unumgänglich ist“ (Artikel 30 Abs. 2). Das Recht auf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war in der Verfassung der DDR nicht ausdrücklich genannt, auch ist dieses Recht in dem Sinne, wie es Gegenstand westlicher Verfassungen ist, in der Literatur der DDR nicht ausdrücklich behandelt worden (vgl. z. B. E. Poppe [Hrsg.] Grundrechte des Bürgers i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1980, S. 163, 265). Schon im Blick auf Artikel 6 IPbürgR kann es aber keinem Zweifel unterliegen, daß die Verfassungsvorschrift des Artikels 30 Abs. 1 VerDDR, indem sie die Persönlichkeit für unantastbar erklärte, den Schutz des Lebens einschloß; demnach ist Artikel 30 Abs. 2 VerDDR zu entnehmen, daß Eingriffe in das Leben gesetzlich begründet sein mußten (vgl. K. Sorgenicht u. a., Verfassung der DDR, 1969 Artikel 30 Anm. 1; G. Brunner, Menschenrechte in der DDR, Baden-Baden 1989 S. 111, 113). Mit der Abschaffung der Todesstrafe durch das Vierte Strafrechtsänderungsgesetz vom 18. Dezember 1987 (GBl. DDR I S. 301) wollte die DDR ersichtlich dem Menschenrecht auf Leben Rechnung tragen. Die Vorschrift des Artikels 30 Abs. 2 Satz 2 der Verfassung der DDR brachte einen Gesichtspunkt zum Ausdruck, der im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bezeichnet wird.

Anders als im nationalsozialistischen Führerstaat gab es in der DDR keine Doktrin, nach der der bloße Wille der Inhaber tatsächlicher Macht Recht zu schaffen vermochte. Gesetze waren verbindlich (vgl. Artikel 49 Abs. 1 der Verfassung); sie konnten allein von der Volkskammer erlassen werden (Artikel 48 Abs. 2 der Verfassung). Zur „Durchführ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war die Rechtspflege berufen, die die Freiheit, das friedliche Leben, die Rechte und die Würde der Menschen zu schützen hatte (Artikel 90 Abs. 1 der Verfassung). Die Richter sollten nach Artikel 96 Abs. 1 der Verfassung in ihrer Rechtsprechung unabhängig sein. Hiernach beanspruchten die Gesetze eine Geltung, die nicht durch Weisungen oder die tatsächliche Staatspraxis bestimmt war. Wer heute den Inhalt der Gesetze der DDR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DR-Verfassung und der Bindung der DDR an die internationalen Menschenrechtspakte zu ermitteln sucht, unterschiebt demnach nicht dem Recht der DDR Inhalte, die mit dem eigenen Anspruch dieses Rechtes unvereinbar wären. Der Erste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der DDR hat am 25. März 1982 in der Volkskammer bei der Einbringung des Grenzgesetzes u. a. ausgeführt, die Regelung über den Schußwaffengebrauch (§ 27) enthalte „nicht mehr und nicht weniger, als auch andere Staaten für ihre Schutzorgane festgelegt haben“; die Anwendung der Schußwaffe sei „die äußerste Maßnahme“ gegen Personen, die „Verbrechen gegen die Rechtsordnung der DDR begangen haben oder sich der Verantwortung für die begangene Rechtsverletzung zu entziehen suchen“ (Volkskammer, 8. Wahlper., 4. Tagung, S. 88f der Sten. Niederschrift).

- b) Eine an den Artikeln 6, 12 IPbürgR orientierte Auslegung des § 27 des Grenzgesetzes kann sich auf den genannten, in Artikel 30 Abs. 2 Satz 2 der DDR-Verfassung enthaltenen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stützen; dieser Grundsatz hat in anderem Zusammenhang auch in § 26 Abs. 2 Satz 2, 3 des Grenzgesetzes sowie in seiner Formulierung, daß die Anwendung der Schußwaffe „die äußerste Maßnahme der Gewaltanwendung gegenüber Personen“ sei (§ 27 Abs. 1 Satz 1 des Grenzgesetzes), Ausdruck gefunden. Es liegt deshalb nahe anzunehmen, daß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so wie er in der DDR galt, verletzt wurde, wenn derjenige als Täter eines Verbrechens nach § 213 Abs. 3 Satz 2 Nr. 2 StGB-DDR verurteilt wurde, der die Mauer mit einer Leiter überstieg. Verhält es sich so, dann war der Gebrauch der Schußwaffe nach § 27 Abs. 2 des Grenzgesetzes unzulässig, weil sich die Flucht nicht als ein Verbrechen nach § 213 Abs. 3 Satz 2 Nr. 2 StGB-DDR darstellte. Aber selbst wenn die vom Obersten Gericht und vom Generalstaatsanwalt vorgegebene Auslegung, im übrigen auch die Anwendbarkeit des § 213 Abs. 3 Satz 2 Nr. 5 StGB-DDR zugrunde gelegt wird, so gestattete doch der Wortlaut des § 27 Abs. 2 des Grenzgesetzes eine Auslegung, die dem auch im Recht der DDR (eingeschränkt) vorhandenen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Rechnung trug. § 27 Abs. 2 Satz 1 des Grenzgesetzes ist dann so zu verstehen: Der Grenzsoldat durfte zwar in den dort bezeichneten Fällen die Schußwaffe zur Verhinderung der Flucht einsetzen; der Rechtfertigungsgrund fand aber eine Grenze, wenn auf einen nach den Umständen unbewaffneten und auch sonst nicht für Leib oder Leben anderer gefährlichen Flüchtling mit dem — bedingten oder unbedingten — Vorsatz, ihn zu töten, geschossen wurde. Hiernach war die bedingt vorsätzliche Tötung, wie sie unter den gegebenen Umständen in der Anwendung von Dauerfeuer zum Ausdruck kam, von dem in menschenrechtsfreundlicher Weise ausgelegten § 27 Abs. 2 des Grenzgesetzes nicht gedeckt; das würde auch dann gelten, wenn der Sachverhalt unter § 27 Abs. 2 Satz 2 des Grenzgesetzes (Ergreifung von Personen, die eines Verbrechens nach § 213 Abs. 3 StGB-DDR dringend verdächtig sind) subsumiert würde. In diesen Fällen hat der Schutz des Lebens Vorrang; dies kann auch auf den Rechtsgedanken des § 27 Abs. 5 Satz 1 des Grenzgesetzes — bei menschenrechtsfreundlicher Auslegung — gestützt werden.

- c) Bei dieser Auslegung ist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nicht von dem Rechtfertigungsgrund des § 27 Abs. 2 des Grenzgesetzes gedeckt gewesen; sie haben danach auch nach dem Recht der DDR einen rechtswidrigen Totschlag begangen.
4. Nach Artikel 103 Abs. 2 GG kann eine Tat nur bestraft werden, wenn die Strafbarkeit zur Tatzeit gesetzlich bestimmt war (Rückwirkungsverbot). Diese Verfassungsbestimmung verbietet die Bestrafung der Beschwerdeführer nicht.
- a) Unter den vorstehend (zu 2, 3) dargelegten Umständen gibt es Gründe für die Auffassung, daß Artikel 103 Abs. 2 GG die Bestrafung der Angeklagten von vornherein nicht hindert, weil die Tat nach dem richtig ausgelegten Recht der DDR zur Tatzeit strafbar war. Ob die Angeklagten dies erkannt haben, ist eine Frage, die lediglich Entschuldigungsgründe betrifft.
- b) Der Senat hat jedoch nicht übersehen, daß im Hinblick auf Artikel 103 Abs. 2 GG die Frage aufgeworfen werden kann, welches Verständnis vom Recht der Tatzeit zugrunde zu legen ist. Wird an das Tatzeitrecht ein Beurteilungsmaßstab angelegt, der die Handlung, obwohl sie vom Staat befohlen worden war, als rechtswidrig erscheinen läßt (vorstehend zu 2, 3), so ergibt sich, daß das Rückwirkungsverbot der Bestrafung nicht entgegensteht. Wird dagegen bei der Würdigung der Rechtslage, die zur Tatzeit bestanden hat, hauptsächlich auf die tatsächlichen Machtverhältnisse im Staat abgestellt, so kann die Anwendung des Artikels 103 Abs. 2 GG zu einem anderen Ergebnis führen. Das gilt vor allem, wenn dem Angeklagten von einer staatlichen Stelle befohlen worden ist, ein allgemeines anerkanntes Recht, zumal das Recht auf Leben, zu verletzen. Hier kann sich die Frage stellen, ob und unter welchen Umständen aus einem solchen Befehl zugunsten

des Angeklagten die Annahme hergeleitet werden muß, die Strafbarkeit sei zur Tatzeit nicht gesetzlich bestimmt gewesen.

- aa) Die Frage, welche Bedeutung Artikel 103 Abs. 2 GG für die Beurteilung von Handlungen hat, die unter einem früheren Regime im staatlichen Auftrag vorgenommen worden sind und Menschenrechte wie das Recht auf Leben verletzen, ist noch nicht vollständig geklärt (vgl. Schönemann in Festschrift für Hans-Jürgen Bruns, 1978, S. 223 ff.; Dencker, KritV 73, 1990, S. 299, 304 und Polakiewicz EuGRZ 1992, 177, 188). Die in diesem Zusammenhang genannte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VerfGE 3, 225 ff.; 6, 195 ff.) betreffen nicht das Strafrecht; auch die Frage, ob eine laufende strafrechtliche Verjährungsfrist verlängert werden kann (BVerfGE 25, 269 ff.), ist nicht einschlägig. Das Problem des Rückwirkungsverbots bei Rechtfertigungsgründen ist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vom Obersten Gerichtshof für die Britische Zone aufgeworfen worden (OGHSt 2, 231 ff.).

Die in der Rechtsprechung des Internationalen Militärtribunals von Nürnberg sowie insbesondere in der Entscheidung im sogenannten Juristenprozeß (III. US-Militärgerichtshof, Urteil vom 4. Dezember 1947, S. 29 ff. des offiziellen Textes) unter wesentlichem Einfluß angelsächsischer Rechtsüberzeugungen entwickelten Gesichtspunkte sind von der späteren deutschen Rechtsprechung nicht übernommen worden. Das Verbot der Verurteilung von Taten, die zur Zeit ihrer Begehung nicht strafbar waren, findet sich auch in Artikel 15 des Internationalen Pakts sowie in Artikel 7 MRK. Doch ist beiden Vorschriften ein zweiter Absatz angefügt, in dem es heißt, das grundsätzliche Rückwirkungsverbot schließe nicht die Verurteilung von Personen aus, deren Tat zur Zeit ihrer Begehung nach den von der Völkergemeinschaft anerkannten allgemeinen Rechtsgrundsätzen strafbar wa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jedoch gegenüber Artikel 7 Abs. 2 MRK den Vorbehalt (Artikel 64 MRK) gemacht, daß die Vorschrift nur in den Grenzen des Artikels 103 Abs. 2 GG angewandt werden würde (BGBl. II 1954 S. 14). Gegen Artikel 15 Abs. 2 des Internationalen Pakts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keinen Vorbehalt erklärt; das ändert nichts daran, daß auch insoweit Artikel 103 Abs. 2 GG als Verfassungsrecht vorgeht.

Rechtfertigungsgründe sind nicht generell von dem Schutzbereich des Artikels 103 Abs. 2 GG ausgeschlossen (vgl. Rüping, Bonner Kommentar — Zweite Bearbeitung — Artikel 103 Abs. 2 Rdn. 50; Kratzsch GA 1971, 65 ff.; Engels GA 1982, 109, 114 ff.). Das gilt auch für das in Artikel 103 Abs. 2 GG enthal-

tene Rückwirkungsverbot. Der Senat folgt nicht dem Vorschlag (vgl. neuestens F. C. Schroeder JZ 1992, 990, 991), das Rückwirkungsverbot generell nur auf die Tatbestandsstufe und nicht auf die Rechtswidrigkeitsstufe zu beziehen. Nicht immer spiegelt das Verhältnis von Tatbestand und Rechtfertigungsgrund einen Sachverhalt wider, bei dem die Rechtsgutverletzung auch in den gerechtfertigten Fällen ein soziales Unwerturteil erlaubt; die Entscheidung des Gesetzgebers, den Tatbestand einzuschränken oder aber bei uneingeschränktem Tatbestand einen Rechtfertigungsgrund vorzusehen, ist unter Umständen nur technischer Natur. War eine tatbestandsmäßige Handlung zur Tatzeit nicht rechtswidrig, so kann sie demnach grundsätzlich nicht bestraft werden, wenn der Rechtfertigungsgrund nachträglich beseitigt worden ist (Eser in Schönke/Schröder 24. Aufl. § 2 Rdn. 3). Bleibt nämlich ein früher vorgesehener Rechtfertigungsgrund außer Betracht, so wird das frühere Recht zum Nachteil des Angeklagten verändert (vgl. Jakob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 Aufl., 1991 S. 121). Insoweit ist mithin auch im Rahmen der Prüfung nach § 2 Abs. 3 StGB grundsätzlich das Rückwirkungsverbot zu beachten.

Aus dieser Erwägung ist in der neuesten Diskussion im Hinblick auf Fälle der vorliegenden Art die Folgerung abgeleitet worden, daß ein zur Tatzeit praktizierter Rechtfertigungsgrund, mag er auch übergeordneten Normen widersprechen, nicht zum Nachteil des Angeklagten außer Betracht bleiben darf, weil dann unter Verstoß gegen Artikel 103 Abs. 2 GG eine Strafbarkeit begründet würde, die zur Tatzeit nicht bestanden hat (Jakobs in J. Isensee [Hrsg.], Vergangenheitsbewältigung durch Recht, 1992, S. 36 ff.; dort auch Isensee S. 91, 105 ff.; Grünwald StV 1991, 31, 33; Rittstieg, Demokratie und Recht 1991, 404; Pieroth VVDStRL 51, 1992, S. 92 ff., 102 ff., 144 ff., 168 ff.; dort auch Isensee S. 134 ff.; Dencker KritV 73, 1990, S. 299, 306; differenzierend Polakiewicz EuGRZ 1992, 177, 188 ff.; vgl. auch Dreier, VVDStRL 51, 1992, S. 137).

- bb) Der Senat folgt dieser Auffassung im Ergebnis nicht.

(1) Dabei sind allerdings nicht die Vorschriften der DDR über die Bestrafung vo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die Menschlichkeit und von Kriegsverbrechen (insbesondere Artikel 91 Satz 1 der Verfassung der DDR) oder die Bestimmung des § 95 StGB-DDR heranzuziehen. Die letztgenannte Bestimmung schließt zwar anscheinend ohne Einschränkung die Berufung auf grund- und menschenrechtswidrige Gesetze aus. Wie ihre Stellung im Gesetz zeigt, betrifft die Vorschrift aber nur die in den §§ 85 bis 94

StGB-DDR bezeichneten Verbrechen; eine Nachprüfung von Gesetzen am Maßstab der Grund- und Menschenrechte sollte sie nicht generell begründen. Dem entspricht es, daß § 95 StGB-DDR nach der damaligen offiziellen Auslegung (DDR-Kommentar § 95 Anm. 1) den Inhalt von Artikel 8 des Statuts des Internationalen Militärtribunals von Nürnberg übernehmen sollte.

(2) Der Senat ist aus folgendem Grunde der Ansicht, daß Artikel 103 Abs. 2 GG hier nicht der Annahme entgegensteht, die Tat sei rechtswidrig: Entscheidend ist, wie dargestellt, ob die Strafbarkeit „gesetzlich bestimmt war“, bevor die Tat begangen wurde. Bei der Prüfung, ob es sich so verhalten hat, ist der Richter nicht im Sinne reiner Faktizität an diejenige Interpretation gebunden, die zur Tatzeit in der Staatspraxis Ausdruck gefunden hat. Konnte das Tatzeitrecht bei Beachtung der vom Wortsinne des Gesetzes gegebenen Grenzen im Lichte der Verfassung der DDR so ausgelegt werden, daß den völkerrechtlichen Bindungen der DDR im Hinblick auf Menschenrechte entsprochen wurde, so ist das Tatzeitrecht in dieser menschenrechtsfreundlichen Auslegung als das Recht zu verstehen, das die Strafbarkeit zur Zeit der Tat im Sinne des Artikels 103 Abs. 2 GG „gesetzlich bestimmt“ hat (im Ergebnis ähnlich Alexy VVDSIRL 51, 1992, 132ff.; Schünemann a. a. O.; Lüderssen ZStW 104 [1992], S. 735, 779ff.; vgl. ferner Starck und Maurer VVDSIRL 51, 1992, S. 141ff., 147f.). Ein Rechtfertigungsgrund, der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gerechtfertigt hätte, wurde zwar in der Staatspraxis, wie sie sich in der Befehlslage ausdrückte, angenommen; er durfte aber dem richtig interpretierten Gesetz schon damals nicht entnommen werden. Das Rückwirkungsverbot soll den Angeklagten vor Willkür schützen und die Strafgewalt auf den Vollzug der allgemeinen Gesetze beschränken (Schreiber, Gesetz und Richter, 1976, S. 217); es schützt das Vertrauen, das der Angeklagte zur Tatzeit in den Fortbestand des damals geltenden Rechts gesetzt hat (Rüping, Bonner Kommentar — Zweitbearbeitung —, Artikel 103 Abs. 2 GG Rdn. 16 m. w. N.). Diese verfassungsrechtlichen Schutzrichtungen werden hier nicht verfehlt: Die Erwartung, das Recht werde, wie in der Staatspraxis zur Tatzeit, auch in Zukunft so angewandt werden, daß ein menschenrechtswidriger Rechtfertigungsgrund anerkannt wird, ist nicht schutzwürdig. Es ist keine Willkür, wenn der Angeklagte, was die Rechtswidrigkeit seines Tuns angeht, so beurteilt wird, wie er bei richtiger Auslegung des DDR-Rechts schon zur Tatzeit hätte behandelt werden müssen. Nichts anderes könnte im übrigen im Ergebnis gelten, wenn ein gesetzlicher Rechtfertigungsgrund, der

gleich gewichtigen Einwendungen ausgesetzt ist, überhaupt keiner Auslegung zugänglich wäre, die sich an den Menschenrechten orientiert.

- c) Steht hiernach den Angeklagten kein Rechtfertigungsgrund zur Seite, so haben sie rechtswidrig den Tatbestand des § 212 StGB erfüllt. Deswegen trifft im Ergebnis die Auffassung der Jugendkammer zu, daß das 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wendbar ist, weil es im Sinne des § 2 Abs. 3 StGB milder ist als die entsprechenden Tatbestände (§§ 112, 113) des Strafgesetzbuchs der DDR; dies ergibt sich daraus, daß in § 213 StGB für minder schwere Fälle ein niedrigerer Strafraum vorgesehen ist.

III.

1. Auf dieser Grundlage ergibt die sachlichrechtliche Nachprüfung, daß die Jugendkammer das Verhalten der Angeklagten zutreffend als gemeinschaftlichen Totschlag (§§ 212, 25 Abs. 2 StGB) gewertet hat.
 - a) Die mit der Abgabe von Dauerfeuer verbundene, den Angeklagten bewußte besondere Gefährdung des Tatopfers ist von der Jugendkammer im Zusammenhang mit der Befehlslage, der die Angeklagten entsprechen wollten, ohne Rechtsverstoß zur Grundlage ihrer Annahme gemacht worden, die Angeklagten hätten mit bedingtem Tötungsvorsatz gehandelt. Durch diesen Vorsatz unterscheidet sich die abgeurteilte Tat von dem in der Entscheidung BGHSt 35, 379 behandelten Fall; dort hatte der Beamte nach der vom Revisionsgericht hingenommenen Feststellung des Tatrichters eine tödliche Verletzung des Fliehenden nicht billigend in Kauf genommen (a. a. O. S. 386).
 - b) Auch der Angeklagte H war Täter. Zwar hat er das Tatopfer nur am Knie getroffen, wie er es beabsichtigt hatte. Indessen haben beide Angeklagten übereinstimmend mit Dauerfeuer geschossen, um S am Übersteigen der Mauer zu hindern, selbst wenn es ihn das Leben kosten sollte. Zwar hat, seitdem der Angeklagte H den Turm verließ, kein Kontakt zwischen den beiden Angeklagten bestanden. Beide handelten jedoch unter dem Einfluß des gleichen Befehls mit gleicher Zielsetzung. Allerdings sind bei nur bedingtem Vorsatz an die Gemeinschaftlichkeit der Tatbegehung (§ 25 Abs. 2 StGB) hohe Anforderungen zu stellen. Ihnen wird das Urteil der Jugendkammer indessen noch gerecht. Beiden Angeklagten war befohlen, selbst unter Inkaufnahme einer Tötung auf den Flüchtling zu schießen, wenn dessen Flucht nicht anders sicher zu verhindern war. Beide gingen, wie der Tatrichter festgestellt hat, davon aus, daß jeweils der andere dem Befehl entsprechen werde. Mit ihrem jeweiligen Verhalten gaben sie dem anderen zu erkennen, daß sie das Ziel verfolgten, das ihnen beiden durch den Befehl vorgegeben war. Es entsprach der Befehlslage,

daß jeder der beiden Soldaten durch sein Schießen zur Fluchtverhinderung beitrug. Unter diesen Umständen muß sich der Angeklagte H das Verhalten des Mitangeklagten, das zur tödlichen Verletzung führte, im Sinne arbeitsteiliger Mittäterschaft zurechnen lassen.

Die Vorschrift des StGB-DDR über die Mittäterschaft (§ 22 Abs. 2 Nr. 2) begründete keine mildere Beurteilung im Sinne des § 2 Abs. 3 StGB. Die Angeklagten haben die Tat auch im Sinne des § 22 Abs. 2 Nr. 2 StGB-DDR gemeinschaftlich ausgeführt, indem beide mit bedingtem Tötungsvorsatz schossen. Für S wurde ungeachtet der — nicht geklärten — Reihenfolge der Schüsse jedenfalls die Chance, sich den Schüssen des Angeklagten W durch Übersteigen der Mauer zu entziehen, dadurch vermindert, daß auch der Angeklagte H auf ihn schoß. Insofern hat auch dieser Angeklagte Handlungen vorgenommen, die geeignet waren, den Tod des Opfers herbeizuführen (vgl. DDR-Kommentar § 22 StGB Anm. 5 unter Hinweis auf OG NJ 1973, 87 und 177).

- c) Beide Beschwerdeführer waren nicht etwa nur Gehilfen derer, auf die die Befehle zurückgingen. Der Senat braucht nicht auf die Frage einzugehen, ob und in welcher Weise die Neufassung der Vorschrift des § 25 Abs. 1 StGB durch das 2. StrRG eine Beurteilung ausschließt, wie sie der Bundesgerichtshof in BGHSt 18, 87 zugunsten bloßer Teilnahme vorgenommen hatte (vgl. auch BGH NSTZ 1987, 224f.). Hier haben die Angeklagten nicht nur alle Tatbestandsmerkmale, auch durch wechselseitige Zurechnung arbeitsteiligen Verhaltens, erfüllt. Sie haben auch, anders etwa als diejenigen, die unmittelbar vor dem Schießen einen Befehl entgegennehmen, einen gewissen Handlungsspielraum gehabt, weil sie beim plötzlichen Erscheinen des Flüchtlings auf sich allein gestellt waren. Schon dieser Umstand kennzeichnet ihr Verhalten als Täterschaft.
2. Die Angeklagten haben den — mangels eines beachtlichen Rechtfertigungsgrundes rechtswidrigen — Totschlag auf Befehl begangen. Die Feststellungen ergeben, daß sie bei ihrer Tat nicht erkannt haben, daß die Ausführung des Befehls gegen Strafgesetze verstieß (vgl. UA S. 55, 58). Dies steht indessen ihrer Schuld nicht entgegen.
- a) Der Senat hatte in diesem Zusammenhang zunächst zu prüfen, ob bei einem Handeln auf Befehl § 258 Abs. 1 StGB-DDR im Hinblick auf § 2 Abs. 3 StGB milder ist als die entsprechende Vorschrift des Bundesrechtes (§ 5 Abs. 1 WStG). Das wäre der Fall, sofern der Soldat nach § 258 Abs. 1 StGB-DDR immer schon dann von Verantwortung frei wäre, wenn er nicht positiv erkannt hat, daß die Ausführung des Befehls gegen Strafgesetze verstieß. In diesem Sinne können Ausführungen in dem DDR-Kommentar verstanden werden (§ 258 StGB Anm. 2, 3 d). Indessen ist diese Kommentierung mit dem Wortsinn des Gesetzes nicht vereinbar. Nach § 258 Abs. 1 StGB-DDR wird der Soldat nicht von

seiner Verantwortung befreit, wenn die Ausführung des Befehls offensichtlich gegen die anerkannten Normen des Völkerrechts oder gegen Strafgesetze verstößt. Die Vorschrift kann nur so verstanden werden, daß in diesem Falle auch derjenige, der den Verstoß gegen das Strafrecht nicht erkannt hat, für seine Handlung bestraft werden kann; nur für diese Personengruppe ist der Bezug auf die Offensichtlichkeit des Strafrechtsverstoßes sinnvoll, während es bei demjenigen, der die Strafrechtswidrigkeit eingesehen hat, nicht darauf ankommen kann, ob diese offensichtlich war oder nicht.

Hiernach war im Rahmen des sonst milderen Bundesrechtes § 5 Abs. 1 WStG anzuwenden. Allerdings gilt das Wehrstrafgesetz unmittelbar nur für Soldaten der Bundeswehr (§ 1 Abs. 1 WStG). Da es aber unbillig wäre, das Untergebenenverhältnis der beiden Angeklagten gegenüber ihren Befehlsgewehrn weder nach dem Recht der DDR noch nach Bundesrecht zu berücksichtigen, ist die Vorschrift des § 5 WStG zugunsten der Angeklagten entsprechend anzuwenden.

- b) Nach § 5 Abs. 1 WStG trifft den Untergebenen eine Schuld nur, wenn er erkennt, daß es sich um eine rechtswidrige Tat handelt oder dies nach den ihm bekannten Umständen offensichtlich ist. Die erste der genannten Voraussetzungen liegt, wie dargelegt, nicht vor. Ob die Angeklagten nach § 5 Abs. 1 WStG entschuldigt sind, hängt demnach davon ab, ob es nach den ihnen bekannten Umständen offensichtlich war, daß ihnen eine rechtswidrige Tat im Sinne des Strafgesetzbuchs (§ 11 Abs. 1 Nr. 5 StGB) befohlen worden war.

Die Jugendkammer nimmt an, es sei für die Angeklagten nach den ihnen bekannten Umständen offensichtlich gewesen, daß sie mit dem ihnen befohlenen Schießen ein Tötungsdelikt im Sinne des Strafgesetzbuchs begingen. Diese Bewertung hält im Ergebnis der sachlichen Nachprüfung stand.

Die Jugendkammer hat nicht übersehen, daß die Angeklagten als Grenzsoldaten der DDR einer besonders intensiven politischen Indoktrination ausgesetzt waren und daß sie zuvor „im Geiste des Sozialismus mit entsprechenden Feindbildern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von Personen, die unter Überwindung der Sperranlagen die DDR verlassen wollen, aufgewachsen“ sind. Sie hat auch unter diesen Umständen nicht die hohen Anforderungen verfehlt, die an die Offensichtlichkeit im Sinne des § 5 Abs. 1 WStG zu stellen sind. Der Soldat hat keine Prüfungspflicht (Scherer/Alff, Soldatengesetz, 6. Aufl. 1988 § 11 Rdn. 29). Wo er Zweifel hegt, die er nicht beheben kann, darf er dem Befehl folgen; offensichtlich ist der Strafrechtsverstoß nur dann, wenn er jenseits aller Zweifel liegt (Amtliche Begründung zum Entwurf des Soldatengesetzes, BT-Drucksache 2/1700 S. 21; vgl. auch Schölz/Lingens WStG 3. Aufl. 1988 § 5 Rdn. 12).

Es ist aus Rechtsgründen nicht zu beanstanden, wenn die Jugendkammer gleichwohl angenommen hat, es sei nach den Umständen offensichtlich gewesen, daß das Schießen hier gegen das Strafrecht verstieß. Die Jugendkammer hebt zutreffend auf das „Gebot der Menschlichkeit“ ab, zu dem u. a. gehöre, daß auch der Straftäter ein Recht auf Leben hat. Damit will sie sagen, es sei ohne weiteres ersichtlich gewesen, daß der Staat nicht das Recht habe, einen Menschen, der, ohne andere zu bedrohen, unter Überwindung der Mauer von einem Teil Berlins in einen anderen hinüberwechseln wollte, zur Verhinderung dieses unerlaubten Grenzübertritts töten zu lassen. Den Revisionen ist zuzugeben, daß die Anwendung des Merkmals „offensichtlich“ hier sehr schwierig ist. Immerhin ist während der langen Jahre, in denen an der Mauer und an den sonstigen innerdeutschen Grenzen geschossen wurde, nicht bekannt geworden, daß Menschen, die in der DDR in Politik, Truppenführung, Justiz und Wissenschaft Verantwortung trugen, gegen das Töten an der Grenze öffentlich Stellung genommen haben. Verfahren gegen Schützen waren nicht durchgeführt worden. Angesichts des Lebensweges und der Umwelt der Angeklagten erscheint es auch nicht angemessen, ihnen „Bequemlichkeit“, „Rechtsblindheit“ und Verzicht auf eigenes Denken zum Vorwurf zu machen (UA S. 58). Schließlich sollte es den Angeklagten H nicht belasten, daß er „nach seiner eigenen Einlassung unmittelbar nach der Tat erkannt hat, daß sein Vorgehen gegenüber S unmenschlich war“ (UA S. 58); dieser Umstand kann auch so gedeutet werden, daß die Konfrontation mit den Folgen der Schüsse das Gewissen des Angeklagten erstmals geweckt hat.

Gleichwohl ist der Jugendkammer letztlich darin zuzustimmen, daß die Tötung eines unbewaffneten Flüchtlings durch Dauerfeuer unter den gegebenen Umständen ein derart schreckliches und jeder vernünftigen Rechtfertigung entzogenes Tun war, daß der Verstoß gegen das elementare Tötungsverbot auch für einen indoktrinierten Menschen ohne weiteres einsichtig, also offensichtlich war. Dem entspricht es, daß die große Mehrheit der Bevölkerung in der DDR die Anwendung von Schußwaffen an der Grenze mißbilligte. Daß es sich so verhielt, ist allgemeinkundig. Auch der Umstand, daß die Befehlslage der Geheimhaltung des Vorganges Vorrang vor einer schnellen Lebensrettung des Opfers gab, zeigt, in welchem Maße die Verantwortlichen eine Mißbilligung der Todesschüsse durch die Bevölkerung voraussetzten. Das Tatopfer S, ein Zimmermann, hatte es strikt abgelehnt, zu den Grenztruppen zu gehen (UA S. 14).

3. Der Tatrichter hat nicht ausgeschlossen, daß die Angeklagten geglaubt haben, sie müßten einen

Grenzbrecher zur Verhinderung der Flucht auch dann, dem Befehl entsprechend, töten, wenn der Befehl rechtswidrig war. Es ist aus Rechtsgründen nicht zu beanstanden, daß der Tatrichter angenommen hat, dieser Irrtum stelle als Annahme eines nicht anerkannten Rechtfertigungsgrundes einen Verbotssirrtum dar, der im Sinne des § 17 Satz 2 StGB von den Angeklagten vermieden werden konnte. Der Tatrichter hat zur Begründung der letztgenannten Wertung wiederum darauf hingewiesen, daß das Leben das höchste aller Rechtsgüter sei. Dem kann aus Rechtsgründen nicht entgegengetreten werden. Der Tatrichter hätte in diesem Zusammenhang auch darauf hinweisen können, daß den Angeklagten bei ihrer Schulung gesagt worden ist, Befehle, die gegen die Menschlichkeit verstießen, brauchten nicht befolgt zu werden (UA S. 12).

Auch im Zusammenhang mit der Frage des Verbotssirrtums würde die Anwendung des DDR-Rechts zu keiner mildereren Beurteilung führen (§ 2 Abs. 3 StGB). Zwar ist im Schrifttum der DDR ausgeführt worden, der Täter handle (nur dann) vorsätzlich, wenn er sich bewußt sei, gegen die sozialen Grundnormen zu verstoßen (DDR-Kommentar § 6 Anm. 1). Nach Lekschas u. a. schließt der Vorsatz die „Selbsterkenntnis ein, sich entgegen den Grundregeln menschlichen Zusammenlebens zu einem sozial negativen Verhalten entschieden zu haben“ (Strafrecht der DDR, Lehrbuch, 1988, S. 237). Doch gab es hierzu keine einheitliche Auffassung (Lekschas u. a. a. a. O.). Aus der veröffentlichten Rechtsprechung der Gerichte der DDR ergibt sich zu dieser Frage nichts. Aus alledem kann der Senat nicht entnehmen, daß die irrige Annahme, ein offensichtlich gegen das Strafrecht verstoßender Befehl müsse befolgt werden, bei der Anwendung des DDR-Rechts Anlaß gegeben hätte, den Vorsatz zu verneinen.

4. Die Strafzumessung hält der sachlichrechtlichen Nachprüfung stand. Der Tatrichter hat, wie der Zusammenhang der Urteilsgründe zeigt, nicht übersehen, daß die Angeklagten erst nach dem Bau der Berliner Mauer aufgewachsen sind und nach Herkunft und Lebensweg keine Möglichkeit hatten, der Indoktrination eine kritische Einschätzung entgegenzustellen. Ihre handwerkliche Berufsausbildung hat dazu ersichtlich ebenso wie die Schulausbildung nicht beitragen können. Die Angeklagten standen in der militärischen Hierarchie ganz unten. Sie sind in gewisser Weise auch Opfer der mit dieser Grenze verbundenen Verhältnisse. Wie die Verteidigung zutreffend ausgeführt hat, haben Umstände, die die Angeklagten nicht zu vertreten haben, dazu geführt, daß sie vor Funktionsträgern, die über einen größeren Überblick und eine differenziertere Ausbildung verfügten, strafrechtlich zur Verantwortung gezogen worden sind. Dies alles drängte zu milden Strafen. Dem hat die Jugendkammer Rechnung getragen.

Laufhütte

Horstkotte

Schäfer

Häger

Basdorf

Nummer 51

Nur für den Dienstgebrauch

Informationen des Obersten Gerichts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Herausgeber:
Oberstes Geri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26 Berlin, Littenstraße 13

Die Informationen des Obersten Gerichts erscheinen alle zwei Monate. Sie sind nur für den Dienstgebrauch bestimmt!

Verantwortlich für die Zusammenstellung:
 Grundsatzabteilung
 — Unterabteilung Information und Dokumentation —

Inhalt**Gemeinsame Beratung des Plenums des Obersten Gerichts der DDR und der Leit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am 16. Juli 1986**

Gemeinsames Dokument des Obersten Gerichts der DDR und des Ministeriums der Justiz „Aufgaben der Gerichte der DDR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

Rede des Stellvertreters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und Minister der Justiz, Hans-Joachim Heusinger, zur Begründung des gemeinsamen Dokuments

Rede des Präsidenten des Obersten Gerichts der DDR, Dr. Günter Sarge, zur Begründung des gemeinsamen Dokuments

Diskussionsbeiträge

Genosse Siegfried Heger, Sektorenleiter beim Zentralkomitee der SED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Rostock, Inge Kersten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Karl-Marx-Stadt, Dr. Gerhard Hünefeld

Oberstes Geri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Plenum —

Ministerium der Justiz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gaben der Gerichte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der SED**I.**

Die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mit ihren anspruchsvollen Zielen und Wegen zur Fortsetzung der bewährten Innen- und Außenpolitik zum Wohle des Volkes und zur Erhaltung des Friedens sind verbindliche Grundlage für die Tätigkeit aller Gerichte. Sie sind den Richtern, Sekretären und Mitarbeitern der Gerichte, den Schöffen sowie den Mitgliedern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Richtschnur ihres Handelns und Maßstab für die Qualität ihrer Arbeit.

Die Wertschätzung der Arbeit der Justizorgane, die der Parteitag zum Ausdruck brachte, ist für alle Mitarbeiter eine hohe Verpflichtung, die Beschlüsse mit ganzer Kraft und hoher Einsatzbereitschaft umzusetzen. Dabei gibt der Beschluß des Sekretariats des Zentralkomitees vom 24. Oktober 1984 zum Bericht der Kreisleitung der SED Annaberg aktuelle Orientierungen.

Schwerpunkte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sind:

— Unterstützung der außenpolitischen Ziele und Maßnahmen von Partei und Regierung mit den Mitteln des sozialistischen Rechts;

- Maßnahmen zur allseitigen Stärkung der Arbeiter- und Bauern-Macht und zur Gewährleistung des zuverlässigen Schutzes d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vor allem der staatlichen Sicherheit der DDR sowie der öffentlichen Ordnung;
- Unterstütz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im Interesse eines hohen Wirtschaftswachstums, um die Einheit von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kontinuierlich fortzuführen, den Leistungswillen der Werktätigen zu fördern und volkswirtschaftliche Verluste zu verhindern;
- Auspräg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durch Einbeziehung der Werktätigen in die gerichtliche Tätigkeit, insbesondere die Erhöhung der Rolle der Schöffen und der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 Beitrag zur Ent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tensweisen, zur Erhöhung der Geborgenheit der Bürger sowie zur Festigung ihres Vertrauensverhältnisses zur Partei der Arbeiterklasse und zum sozialistischen Staat; besonders sind der Schutz des Lebens, der Gesundheit, des persönlichen Eigentums sowie die Garantien für die Realisierung ihrer Rechte weiter auszubauen;
- Förderung der sozialistischen Persönlichkeitsentwicklung Jugendlicher und die Gestaltung sozialistischer Familienbeziehungen.

Die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übertragenen Aufgaben setzt eine zielgerichtete Leitungstätigkeit unter der Führung der Grundorganisation der SED voraus. Sie hat sich auf Schwerpunkte zu konzentrieren und zu gewährleisten, daß auf allen Gebieten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eine hohe politisch-juristische Qualität der Arbeit gesichert wird. Das erfordert, den demokratischen Zentralismus strikt durchzusetzen. Dabei is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in den einzelnen Ebenen zu stärken.

Die verantwortungsbewußte Handhabung von Recht und Gesetz, die enge Verbundenheit mit den Werktätigen, Aufgeschlossenheit und Konsequenz im Umgang mit den Menschen gehören dabei zum Berufsethos der Richter unseres Landes und bestimmen die Arbeitsweise der Mitarbeiter der Gerichte.

Die Gerichte haben ihre Tätigkeit in di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des Territoriums einzuordnen. Sie haben zur Gewährleistung der Führungstätigkeit der leitenden Parteiorgane beizutragen und das Zusammenwirken mit den Staats-, Justiz- und Sicherheitsorganen zu gewährleist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besonders den Gewerkschaften und der FDJ ist eng zusammenzuarbeiten.

Aufmerksam und sorgfältig haben die Gerichte alle gesellschaftlichen Kräfte, Kollektive und Bürger zu unterstützen, die sich für die Verwirklichung von Recht und Gesetz, von Ordnung und Sicherheit einsetzen.

Große Bedeutung erlangt die rechtserzieherische und rechtspropagandistische Tätigkeit der Gerichte. Sie hat noch stärker die Einheit von Pflichten und Rechten

zu verdeutlichen und beizutragen, das Treueverhalten zur sozialistischen Heimat, die Förderung des Leistungswillens der Werktätigen sowie eine sozialistische Lebensweise auszuprägen.

Für die Gerichte der DDR ergeben sich aus dem XI. Parteitag folgende Aufgaben:

II.

1. Die Haupttätigkeit der Gerichte ist die Rechtsprechung. Diese ist Ausübung sozialistischer Staatsmacht mit spezifischen Mitteln und dient dem Schutz des Staates und der Rechte seiner Bürger sowie der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 Sie erfolgt nach dem Grundsatz, daß alle Bürger vor dem Gesetz gleich sind. Ihre Qualität ist entsprechend den vom Parteitag formulierten Aufgaben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und Rechtssicherheit zu erhöhen. Jede Entscheidung muß politisch durchdacht, gesetzlich richtig, überzeugend begründet und gesellschaftlich wirksam sein.

Das erfordert, die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für die Bearbeitung und Entscheidung der Verfahren zu erhöhen. In jeder Phase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ist auf die strikte Gesetzlichkeit der Verfahrensdurchführung zu achten. Im besonderen Maße gilt das für die Eröffnung des Hauptverfahrens in Strafsachen. Beweise sind sorgfältig zu erheben und zu würdigen. Das Recht auf Verteidigung ist umfassend zu gewährleisten. Im Strafverfahren hat das Gericht zu garantieren, daß jeder Schuldige zur Verantwortung gezogen, aber kein Unschuldiger bestraft wird.

Bei der Durchführung der Strafverfahren ist hinsichtlich der Strafzumessung weiterhin von den bewährten Grundsätzen der Individualisierung und Differenzierung auszugehen. Die konsequente Anwendung des Strafrechts ist besonders gegenüber solchen Tätern zu gewährleisten, die die staatliche Sicherheit und öffentliche Ordnung gefährden, die mit ihren Handlungen die Bevölkerung beunruhigen, die sich auf Kosten des sozialistischen Staates oder der Bürger bereichern, die parasitär leben, die unbelehrbar und nicht gewillt sind, die elementarsten Regeln des Zusammenlebens zu erfüllen.

Das Niveau der Arbeit der Rechtsmittelsenate ist zu erhöhen. Die Überprüfbarkeit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durch ein Gericht zweiter Instanz ist eine Garantie sozialistischer Gesetzlichkeit und Gerechtigkeit, dient der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und stärkt das Vertrauen der Bürger zum sozialistischen Staat und zu seinen Gerichten. Das Rechtsmittelverfahren muß gewährleisten, daß alle materiellen und prozessualen Normen richtig angewandt und fehlerhafte Entscheidungen korrigiert werden.

2.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erfolgt als Verfassungsauftrag durch das Oberste Gericht und im jeweiligen Territorium durch die Bezirksgerichte. Eine effektive Leitung der Rechtsprechung

bedingt die konsequente Durchsetzung des Prinzips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bei Wahr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für ihre Entscheidungen. Die vom Plenum, Präsidium und den Kollegien des Obersten Gerichts sowie die in gemeinsamen Standpunkten gegebenen Orientierungen sind voll durchzusetzen. Die Kontrolle der Umsetzung dieser Dokumente ist wirksam auszubauen.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hat sich vor allem auf die inhaltlichen Schwerpunkte gerichtlicher Tätigkeit zu konzentrieren.

Daraus ergeben sich insbesondere folgende Aufgaben:

- die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zu gewährleisten;
 - die Rechtsprechung zu analysieren und Schlußfolgerungen für die Leitungstätigkeit zu ziehen;
 - verbindliche Orientierungen zur Anwendung der Gesetze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für die Spruchpraxis zu geben;
 - die Mitwirkung gesellschaftlicher Kräfte differenziert unter Berücksichtigung einer effektiven und erzieherisch wirksamen Durchführung des Verfahrens zu gestalten;
 - die Rechtsprechung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anzuleiten und
 - gegen im Zusammenhang mit Gerichtsverfahren festgestellten Verstößen gegen die sozialistische Rechtsordnung mit den gesetzlich übertragenen Befugnissen, insbesondere der Gerichtskritik, vorzugehen sowie mit Hinweisen und Empfehlungen zur Beseitigung von Ursachen und begünstigenden Bedingungen von Straftaten und anderen Rechtsverletzungen beizutragen.
3. Die Unterstützung der innen- und außenpolitischen Zielstellungen von Partei und Regierung, der zuverlässige Schutz d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Rechtsordnung, der Errungenschaften des Volkes und des friedlichen Lebens der Bürger gegen jeden Angriff und unter allen Lagebedingungen ist ein Klassenauftrag an die Gerichte auf allen Rechtsgebieten.

Durch ihre Rechtsprechung haben sie im engen Zusammenwirken mit den anderen Justiz- und Sicherheitsorganen einen wirksamen Beitrag zu leisten, die Macht der Arbeiter und Bauern, die Souveränität der DDR, ihre territoriale Integrität, die Unverletzlichkeit der Grenzen und Transitwege zuverlässig zu schützen sowie die Sicherheit in unserem Lande zu gewährleisten. Jede Form der juristischen Aggression ist strikt zurückzuweisen. Allen subversiven Angriffen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n Grundlagen unseres Staates ist entschieden zu begegnen. Versuche, die öffentliche Ordnung zu untergraben und den realen Sozialismus und seine Errungenschaften zu diffamieren, sind energisch zu unterbinden. Dem Han-

deln engagierter Bürger zur Durchsetzung von Gesetzlichkeit, Ordnung und Sicherheit ist Schutz und Unterstützung zu geben.

Im Rahmen ihrer Zuständigkeit haben die Gerichte einen Beitrag zur Erfüllung der außenwirtschaftlichen Aufgaben zu leisten. Sie haben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Rechte der Bürger und Betriebe gegenüber Verpflichteten im Ausland strikt zu gewährleisten und darauf hinzuwirken, daß sie ihre Rechte gegenüb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n anderen Staaten in vollständiger Übereinstimmung mit den Gesetzen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der DDR ausüben und geltend machen. Die Rechte von Ausländern in der DDR sind auf der Grundlage der Rechtsordnung der DDR zu gewährleisten. Verfahren mit Ausländerbeteiligung sind unter Wahrung der Interessen der DDR und ihrer Bürger zügig und konzentriert durchzuführen.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der in Rechtshilfe- und Konsularverträgen enthaltenen Verpflichtungen ist ein Beitrag der Gerichte zur Stärkung des internationalen Ansehens und der Autorität unseres sozialistischen Staates.

4. Die vom XI. Parteitag beschlossenen zehn Schwerpunkte der ökonomischen Strategie stellen hohe Anforderungen an die Gerichte. Ihre Tätigkeit ist auf die Herausbildung und Festigung einer bewußten Einstellung zur schöpferischen und verantwortungsvollen Arbeit aller Werktätigen zu richten. Die Gerichte haben das Recht so anzuwenden, daß damit Schäden vorgebeugt wird und ökonomische Reserven erschlossen werden. Jede Entscheidung muß unter strikter Beachtung der volkswirtschaftlichen Zusammenhänge und Auswirkungen ergehen.

Die Gerichte haben auf der Grundlage des gemeinsamen Dokumentes der zentralen Justizorgane zur Verwirklich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 dazu beizutragen, daß die Arbeits- und Produktionssicherheit erhöht, die technologische Disziplin gefestigt, das gesellschaftliche Arbeitsvermögen voll genutzt und die Qualität der Erzeugnisse verbessert werden;
- den Kollektiven der Werktätigen zu helfen, den Kampf um vorbildliche Ordnung, Disziplin und Sicherheit zielstrebig zu organisieren;
- den Leistungswillen der Werktätigen und die weitere Verbesserung der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zu fördern.

Die Hauptanstrengungen bei der Unterstütz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durch die Rechtsprechung sind auf den wirksamen Schutz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und der Volkswirtschaft mit allen rechtlichen Mitteln zu konzentrieren. Die Gerichte haben einen wirksamen Beitrag im Kampf gegen Havarien, Brände, Störungen der Produktion, Mißwirtschaft, Vergeudung und Entwendung sozialistischen Eigentums sowie andere kriminelle Handlungen und sonstige Rechtsverletzungen zu leisten, die Schäden und Verluste am Volksvermögen verursachen.

Die Schadenswiedergutmachung ist nachhaltig durchzusetzen. Jedem Täter müssen die zu Unrecht erlangten Vorteile konsequent entzogen werden. Die Realisierung der dem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Forderungen ist zügig zu sichern. Der Schutz der Volkswirtschaft erlangt im Bereich der Schlüsseltechnologien zunehmende Bedeutung. Hier kommt es vor allem auch auf die strikte Gewährleistung des Geheimnisschutzes an.

Im Zusammenhang mit der Entwicklung und Anwendung der Schlüsseltechnologien wachsen die Anforderungen an die Risikobereitschaft. Die Rechtsprechung muß sichern, daß die Übernahme eines vertretbaren Risikos gefördert wird und nicht zu Nachteilen für den Verantwortlichen führt.

Durch die Rechtsprechung und ihre sonstige Tätigkeit haben die Gerichte zur Realisier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die Kombinate und Betriebe zu unterstützen, das Arbeitsrecht noch wirksamer als Leitungsinstrument zu nutzen, insbesondere zur Durchsetzung des Grundsatzes der Einheit von Pflichten und Rechten der Werktätigen, des Leistungsprinzips, der sozialistischen Rationalisierung, der sozialistischen Arbeitsdisziplin und der Sicherung der Rechte der Gewerkschaften. Für die langfristige und vorausschauende Vorbereitung der Werktätigen auf die wachsenden Anforderungen haben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 Fortschritt, vor allem die Entwicklung der Schlüsseltechnologien, besondere Bedeutung.

Die Neuerer- und Patentverfahren sind mit dem Ziel durchzuführen, daß davon Impulse insbesondere für die Rationalisierung, Modernisierung und Effektivierung der Produktion sowie für Fortschritte in der Material- und Energieökonomie ausgehen. Auf die Überwindung aller dem Schöpfervermögen der Werktätigen entgegenstehenden Hemmnisse ist konsequent hinzuwirken.

Die Rechtsprechung hat die Verwirklichung des Wohnungsbauprogramms als Kernstück der Sozialpolitik zu fördern. Bei begründeten Garantieansprüchen der Bürger aus den Versorgungsbeziehungen mit Handels- und Dienstleistungseinrichtungen haben die Gerichte Einfluß auf die Verbesserung der Qualität der Waren und Leistungen zu nehmen. Die erzieherische Einwirkung auf die Bürger zur Erfüllung der dem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Zahlungsansprüche, insbesondere des Mietpreises und anderer selbstverständlicher Zahlungsverpflichtungen, ist weiter zu erhöhen.

5.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sordnung garantiert die Durchsetzung von Recht und Gesetzlichkeit und eine hohe Rechtssicherheit als kostbare Errungenschaften und Werte des Sozialismus. Die Rechtsprechung der Gerichte ist deshalb darauf auszurichten, einen wirksamen Beitrag zur Entwicklung sozialistischer Verhaltensweisen, zur Erhöhung des Wohlbefindens und der Geborgenheit der Bürger sowie zur Festigung ihres Ver-

trauensverhältnisses zur Partei der Arbeiterklasse und zum sozialistischen Staat zu leisten. Besonders sind das Leben, die Gesundheit und das persönliche Eigentum der Bürger zu schützen sowie die Garantien für die Realisierung ihrer Rechte weiter auszubauen. Energisch sind Straftaten zu bekämpfen, die das friedliche Leben der Bürger stören, wie Gewalttätigkeiten, Einbrüche in Wohnungen und anderen Räumlichkeiten, Rowdytum, Sexualstraftaten u. a.

Soweit Straftäter aus vorangegangenen Bestrafungen keine Lehren ziehen und hartnäckig erneut Straftaten begehen, haben die Gerichte nachhaltig Maßnahm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anzuwenden und dabei deutlich zu machen, daß es zum Schutz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ihrer Bürger notwendig ist, in den erforderlichen Fällen strenge Strafen auszusprechen.

Besondere Bedeutung erlangt der Schutz der Rechte der durch Straftaten Geschädigter. Diesen Bürgern ist durch die Gerichte im Rahmen ihrer Möglichkeiten sowie durch eine enge Zusammenarbeit mit anderen Organen (z. B. Staatliche Versicherung) unbürokratisch zu helfen. Die Gerichte haben entsprechend ihren Möglichkeiten die Leistungsbereitschaft der Bürger, ihr aktives Eintreten für die sozialistische Gesetzlichkeit ebenso wie die gewissenhafte Erfüllung ihrer Pflichten im gesellschaftlichen Zusammenleben zu fördern. Dazu gehört die Sicherung der ununterbrochenen Beschäftigung der Werktätigen bei einem notwendigen Arbeitsplatzwechsel als Ausdruck des Grundrechts auf Arbeit, der Schutz der Bürger vor spekulativen Übervorteilungen in den Bürger-Bürger-Beziehungen und die Sicherung einer konsequenten und zügigen Vollstreckung gerichtlich festgestellter Ansprüche, die von den Verpflichteten freiwillig nicht erfüllt werden.

Die Gerichte haben dazu in allen Verfahren die rechtlichen Regelungen des Straf- und Zivilprozeßrechts gewissenhaft zu beachten und bei voller Sicherung der Rechte der Prozeßbeteiligten durchzuführen. Durch eine bürgernahe, überzeugende und kulturvolle Gerichtspraxis ist die Autorität und das Ansehen der Gerichte weiter zu heben.

6. Die Gerichte haben mit ihrer Rechtsprechung die Durchsetzung der Ziele der sozialistischen Jugendpolitik und die Entwicklung sozialistischer Familienbeziehungen zu fördern. Sie haben die gesamtgesellschaftlichen Anstrengungen zur Erziehung und Selbsterziehung junger Menschen wirksam zu unterstützen.

Die Anwendung des Strafrechts hat der Persönlichkeitsentwicklung Jugendlicher und ihrem Hineinwachsen in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zu dienen. Die prozessualen Regelungen für die Gestaltung des Strafverfahrens gegenüber Jugendlichen —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Einbeziehung der Erziehungsberechtigten und anderer Erziehungsträger — sind konsequent zu berücksichtigen. Es sind die vorgesehenen Maß-

nahm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noch differenzierter anzuwenden und die gesellschaftlichen Potenzen für die Erziehung jugendlicher Straftäter, insbesondere im Zusammenhang mit Strafen ohne Freiheitsentzug, voll auszuschöpfen. Bei der Feststellung und Verwirklich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Jugendlicher haben die Gerichte den entwicklungsbedingten Besonderheiten verstärkte Beachtung zu schenken.

In Ehescheidungsverfahren, vor allem in denen Kinder betroffen sind, sind die Aussöhnungsbestrebungen zu verstärken, wenn für die Fortsetzung der Ehe noch Voraussetzungen bestehen. Diese Verfahren erfordern einschließlich der Entscheidungen über das Erziehungsrecht und den Unterhalt besondere Aufmerksamkeit. Die erzieherische Einflußnahme des Gerichts hat bei Ehescheidungen auch zu sichern, daß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geschiedenen Ehegatten ihren Kindern gegenüber verantwortungsbewußt wahrgenommen werden. Die Fragen, die sich aus der Verbindung von Berufstätigkeit und Mutterschaft bei der Erziehung der Kinder ergeben, sind im Zusammenwirken der Gerichte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ihren Organen, den Betrieben und Einrichtungen im Territorium besser zu lösen.

7. Die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übertragenen Aufgaben setzt eine zielgerichtete Leitungstätigkeit voraus.

In ihrem Mittelpunkt steht:

- die Erhöhung der Qualität der Rechtsprechung und ihrer Wirksamkeit,
- die Arbeit mit den Kadern und die Entwicklung eines den hohen Arbeitsanforderungen gerecht werdenden Arbeitskollektivs,
- die Sicherung einer hohen Qualität der Arbeit mit den Schöffen, mit den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und der Einbeziehung Werkstätiger in gerichtliche Verfahren,
- die Öffentlichkeitsarbeit,
- die Erhöhung des Niveaus der Arbeitsorganisation, Informationstätigkeit und der analytischen Arbeit und
- die Verbesserung der Arbeit mit Eingaben,
- die Erfüllung der Aufgaben auf dem Gebiet der Haushaltswirtschaft unter Beachtung des Prinzips der strengsten Sparsamkeit.

Die Ergebnisse und Leistungen jedes Gerichts hängen wesentlich von der Tätigkeit seines Direktors ab. Seine Rolle im Leitungsprozeß bei der Verwirklichung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ist zu erhöhen.

Besonderes Augenmerk ist der Tätigkeit der Kreisgerichtsdirektoren zu widmen. Maßstab der Arbeit sind die in der Dokumentation „Führungsbeispiel Kreisgericht Fürstenwalde“ enthaltenen Anforderungen.

8. Die Vervollkommnung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als Aufgabe und Methode der Leitung der Gerichte erfordert die unabdingbare Durchsetzung zentraler Richtlinien und Beschlüsse, Anordnungen, Weisungen und Orientierungen, die Kontrolle ihrer Durchführung, die kritische Bewertung der erreichten Ergebnisse, die Berichterstattung gegenüber den vorgeordneten Organen sowie den weiteren Ausbau des Erfahrungsaustausches und des Leistungsvergleiches als Formen der Leitung.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Leitung erfordert die Verbesserung des Niveaus der Informationstätigkeit, die strikte Einhaltung der Informationsdisziplin und die Erhöhung der inhaltlichen Aussagekraft der Informationen. Als Grundlage dafür ist der analytischen Arbeit auf allen Ebenen und der realen Einschätzung der Arbeitsergebnisse besonderes Augenmerk zu widmen.

Die Direktoren haben die uneingeschränkte Übermittlung leitungsrelevanter Informationen an die vorgeordneten Leitungsorgane — insbesondere zu politisch bedeutsamen, folgeschweren, die Bevölkerung beunruhigenden und anderen wichtigen Verfahren sowie politisch bedeutsamen Problemen aus der Leitungstätigkeit zu sichern.

9. Die Verbesserung der Qualität der Arbeit erfordert die Erhöhung des politischen und fachlichen Niveaus der Kader. Sie müssen sich durch Charakterfestigkeit, hohes Staatsbewußtsein, durch konsequente Verteidigung der Interessen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Feinfühligkeit gegenüber den Belangen der Bürger und durch verantwortungsbewußte Handhabung von Recht und Gesetz als Ausdruck einer hohen Rechtsicherheit auszeichnen.

In diesem Sinne ist die berufsethische Erziehung der Juristen, auch unter Nutzung der Möglichkeiten der VdJ, zu verbessern.

Bei den Leitern ist die Fähigkeit, sich auf die neuen Anforderungen einzustellen, aktiv und schöpferisch die zentralen Anforderungen zu verwirklichen, weiter auszuprägen. Die Kraft und Fähigkeiten der jungen Kader an den Gerichten für die Lösung der Aufgaben ist voll zu nutzen. Hoch- und Fachschulkadern ist in der Phase ihrer Einarbeitung größte Unterstützung zu gewähren. Die rechtzeitige Vorbereitung junger Kader auf die Übernahme von Leitungsfunktionen ist zu sichern.

Insgesamt muß das Vertrauen in die Kraft und Fähigkeit der Jugend mit der Übertragung von Verantwortung und im Fordern hoher Leistungen zum Ausdruck gebracht werden. Die planmäßige zentrale und bezirkliche Qualifizierung der Juristen und die eigenverantwortliche Weiterbildung ist eine wesentliche Voraussetzung für die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übertragenen Aufgaben. Sie muß auf die systematische Vertiefung und Erneuerung des gesellschaftspolitischen, ökonomischen und fachspezifischen Wissens und die

Erhöhung des Bildungs- und Kulturniveaus gerichtet sein.

10. Die Wirksamkeit der Arbeit der mittleren juristischen Kader ist weiter zu erhöhen und ihre Verantwortung für die Festigung des Vertrauensverhältnisses zwischen den Bürgern und den Gerichten, die Erhöhung der Staatsautorität und die Realisierung der Gesamtaufgabenerfüllung der Gerichte weiter auszuprägen.

Das erfordert die Erhöhung der Rolle und Verantwortung des leitenden Sekretärs und seine stärkere Einbeziehung in die Leitungstätigkeit des Direktors.

Der leitende Sekretär muß vor allem dazu beitragen, daß

- die Arbeit auf dem Gebiet der Vollstreckung weiter qualifiziert,
- die Tätigkeit der Rechtsantragsstelle vervollkommt,
- ein hohes Niveau der Arbeitsorganisation gesichert

wird und die systematische Weiterbildung der mittleren juristischen Kader und der Mitarbeiter der ihnen nachgeordneten Strukturbereiche erfolgt. Seine Verantwortung für die Entwicklung eines schöpferischen Arbeitsklimas ist zu erhöhen.

11. Die Rolle der Schöffen in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ist zu heben. Ihre Hauptaufgabe ist die Rechtsprechung. Es ist zu gewährleisten, daß die Schöffen ihre Funktion als gleichberechtigte Richter voll wahrnehmen können. Ihnen sind in größerem Umfange auch konkrete Aufgaben zur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zu übertragen, insbesondere zur Kontrolle des Erziehungs- und Bewährungsprozesses, zur Kontrolle der Verwirklichung von Gerichtskritiken und Hinweisschreiben sowie zur Einflußnahme auf die Erfüllung von Zahlungsverpflichtungen Werkträger.

Die eigenständige Rechtspropaganda und Rechtserziehung der Schöffen ist zu unterstützen. Ihnen sind Erfahrungen zu vermitteln, wie sie in ihren Betrieben und Wohngebieten einen größeren Beitrag zur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von Ordnung und Sicherheit leisten können. Verstärkt ist darauf hinzuwirken, daß die Schöffenkollektive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staatlichen Leitern, den Parteileitungen sowie den gewerkschaftlichen Vorständen und Leitungen in die Lösung gesamtbetrieblicher und territorialer Aufgaben zur Durchsetzung von Recht und Gesetzlichkeit einbezogen werden. Die Arbeit der Schöffenausschüsse ist vor allem darauf zu richten, die verantwortungsbewußte Teilnahme der Schöffen in der Rechtsprechung zu sichern, die Qualifikation der Schöffen zu erhöhen, die Auswertung ihres gerichtlichen Einsatzes zu gewährleisten, die Schöffen in die vorbeugende Rechtsarbeit in den Betrieben sowie in den Wohngebieten der Städte und in den Gemeinden ein-

zubeziehen und die Wirksamkeit der Schöffenkollektive weiter zu erhöhen.

12. Die Gerichte haben in ihrem Territorium eine hohe Wirksamkeit der Arbeit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zu gewährleisten. Vor allem ist darauf Einfluß zu nehmen, daß die Beratungen fristgemäß durchgeführt, mit einer der Gesetzlichkeit entsprechenden Entscheidung abgeschlossen werden und eine hohe erzieherische Wirksamkeit haben. Die Mitglieder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sind zu befähigen, den wachsenden Anforderungen in der Rechtsprechung, bei der Rechtsverwirklichung und bei der Rechtserziehung gerecht zu werden. Die Schiedskommissionen sind in ihrer Tätigkeit aktiv zu unterstützen. Die Schulungen ihrer Mitglieder sind planmäßig durchzuführen und die Gewerkschaften bei der Anleitung der Konfliktkommissionen und der Qualifizierung ihrer Mitglieder zu unterstützen. Die Möglichkeiten der Schiedskommissionen zur Durchsetzung der Stadt- und Gemeindeordnungen sind zu nutzen. Es ist darauf hinzuwirken, daß ihnen geeignete Ordnungswidrigkeiten zur Beratung und Entscheidung übergeben werden.

In der Arbeit der Beiräte für Schiedskommissionen sind alle gesetzlich bestimmten Aufgaben zur Erhöhung der Wirksamkeit der Schiedskommissionen planmäßig und gründlich zu beraten.

13. Die Orientierungen und Anforderungen im Beschluß des Sekretariats des ZK der SED vom 24. Oktober 1984 zur Berichterstattung der SED-Kreisleitung Annaberg sind verbindliche Aufgabenstellungen für die Gerichte. Über Erkenntnisse und Erfahrungen aus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die für die Führungstätigkeit der Partei bedeutsam sind, sind die leitenden Parteiorgane zu informieren.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als Organe der einheitlichen Staatsmacht haben die Gerichte eng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und deren Organen zusammenzuarbeiten und ihre Tätigkeit noch besser in die gesamt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der Territorien einzuordnen. Die im Gesetz über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dazu enthaltenen Verpflichtungen, besonders zur regelmäßigen Berichterstattung über ihren Beitrag zur Durchsetz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und über die gesellschaftliche Wirksamkeit der Rechtsprechung, sind mit hoher Qualität zu erfüllen.

Auf der Grundlage der langfristigen Programme der Kreistage und anderen Beschlüsse örtlicher Volksvertretungen haben die Gerichte territoriale und betriebliche Maßnahmen zur Verwirklichung von Recht und Gesetz, von Ordnung und Sicherheit sowie zur Rechtserziehung und Rechtspropaganda — besonders in Führungsbeispielen und in Schwerpunktbetrieben — unter Nutzung ihrer spezifischen Möglichkeiten zu unterstützen. Sie wirken an der Verallgemeinerung guter Ergebnisse mit, wobei den Kombinat, Betrieben und Einrichtungen verstärkt Erfahrungen aus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zur Vorbeugung von Rechtsverletzungen zu vermitteln sind.

14. Die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r Staatsanwaltschaft, den Staatlichen Notariaten sowie den Sicherheitsorganen unter strikter Beachtung der Eigenverantwortung eines jeden Organs ist weiterzuentwickeln. Es ist auf ein wirksames, einheitliches, auf Schwerpunkte ausgerichtetes, koordiniertes Zusammenwirken vor allem bei der Einordnung der Tätigkeit der Justiz- und Sicherheitsorgane im Kampf gegen die Kriminalität und anderen Rechtsverletzungen im Territorium auszurichten.

Die vertrauensvolle und sachbezogene Zusammenarbeit mit den Kollegien der Rechtsanwälte ist weiterzuentwickeln.

Regelmäßige Beratungen gemeinsam berührender Probleme in Präsidien der Bezirksgerichte und Dienstbesprechungen der Kreisgerichte mit den Vorständen und den Zweigstellen der Kollegien, Qualifizierungsmaßnahmen und die Einbeziehung der Rechtsanwälte in die Rechtspropaganda und Rechtserziehung dienen dieser Zielstellung.

15. Rechtserziehung und Rechtspropaganda sind in die politisch-ideologische Arbeit des Territoriums einzuordnen und auf die zentral herausgegebenen Schwerpunkte zur Erläuterung des sozialistischen Rechts zu konzentrieren.

Die erzieherische Ausstrahlung der Verfahren, besonders durch Verhandlungen vor erweiterter Öffentlichkeit — in den erforderlichen Fällen auch in den Betrieben — und Verfahrensauswertungen sowie durch gezielte Nutzung anderer Formen gerichtlicher Öffentlichkeitsarbeit ist weiter zu erhöhen.

Aktivitäten und Initiativen der Werktätigen zur Festigung der Gesetzlichkeit, von Ordnung, Disziplin und Sicherheit sind zu unterstützen.

Die rechtserzieherische und rechtspropagandistische Arbeit unter der Jugend ist auf die Wahrnehmung ihrer staatsbürgerlichen Verantwortung, die Mitgestaltung der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und auf ihre aktive und eigenverantwortliche Durchsetzung von Ordnung, Sicherheit und Disziplin im Arbeits- und Freizeitbereich auszurichten.

Zu sichern ist, daß

- die Einheit von Rechtsprechung, Rechtserziehung und Rechtspropaganda umfassend durchgesetzt und die Öffentlichkeitsarbeit als unverzichtbarer Bestandteil der täglichen Arbeit geleitet und geplant wird,
- den Bürgern Rechtskenntnisse, vor allem über rechtliche Regelungen, die die staatsbürgerlichen und die grundlegenden Rechte und Pflichten in der Gesellschaft beinhalten, vermittelt werden,
- der politisch-ideologische Gehalt sowie die Formen und Methoden der rechtspropagan-

distischen Maßnahmen weiter entwickelt werden und

- die Zusammenarbeit mit den Journalisten zur Gewährleistung einer massenwirksamen Rechtspublizistik in den Medien, insbesondere in den Kreisen und Bezirken, vertieft wird.

Die Gerichte haben bei ihrer rechtspropagandistischen und rechtserzieherischen Arbeit eng mit der VdJ und der Urania zusammenzuarbeiten.

16. Die Qualität und Effektivität der Arbeit der Gerichte, ihre Autorität und ihr Ansehen bei den Bürgern werden wesentlich von der Art und Weise der Realisierung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bestimmt. Die Leitungstätigkeit ist deshalb im besonderen auch auf die Erfüllung der in diesem Zusammenhang zu lösenden Aufgaben auszurichten. Es ist vor allem

- die fristgerechte Einleitung der Verwirklichung der Maßnahm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 die wirksame Kontrolle der Bewährungsverurteilungen,
- die unverzügliche Realisierung ausgesprochener Geldstrafen,
- die zügige und konsequente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insbesondere auf dem Gebiet des Unterhalts, zur Sicherung der Ansprüche von Trägern gesellschaftlichen Eigentums und der durch Straftaten geschädigten Bürger

zu sichern.

17. Große Anstrengungen sind darauf zu richten, im Arbeitsstil den Forderungen nach enger Verbundenheit mit den Werktätigen, Aufrichtigkeit, Konsequenz und Gerechtigkeit im Umgang mit den Menschen, wissenschaftlicher Arbeitsweise, strikter Beachtung der Gesetze und hoher Staatsdisziplin sowie nach konsequenter Durchsetzung des Prinzips „Arbeitszeit ist Leistungszeit“ zu entsprechen.

Dazu sind

- alle Verfahren konzentriert, zügig und rational bei voller Sicherung der Rechte der Prozeßbeteiligten durchzuführen,
- durch eine bürgernahe, überzeugende und kulturvolle Gerichtspraxis das Vertrauensverhältnis der Bürger zu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weiter zu festigen,
- die Bürger bei der Wahrnehmung ihrer Angelegenheiten korrekt, höflich und mit hoher Sachkunde zu behandeln,
- effektiv mit dem Bestellsystem zu arbeiten, damit Wartezeiten für die Bürger bei der Wahrnehmung ihrer Rechtsangelegenheiten verkürzt werden,
- die Sprechstunden- und Rechtsauskunftstätigkeit in betrieblichen und territorialen Schwer-

punkten — auch unter Mitwirkung der gesellschaftlichen Kräfte — entsprechend den territorialen Erfordernissen und Möglichkeiten, weiter zu entwickeln,

- eine hohe Qualität und tagfertige Bearbeitung des dienstlichen Schriftgutes zu sichern.

Große Beachtung ist der Verbesserung der Eingabenbearbeitung zu schenken. Dabei ist zur schnellen und unbürokratischen Lösung der den Anliegen zugrunde liegenden Konflikte das vertrauensvolle Gespräch mit den Bürgern und der enge Kontakt zu ihren Kollektiven zu suchen und die analytische Auswertung der Eingaben für die Verbesserung der Arbeit, den Inhalt der Qualifizierungsmaßnahmen sowie die Erziehung der Mitarbeiter zu nutzen.

18. Der Durchsetzung einer rationellen Arbeitsorganisation am Gericht und der weiteren Erhöhung der Gerichtskultur ist besonderes Augenmerk zu widmen. Für den Aufbau rechnergestützter Arbeitsplätze an den Gerichten sind planmäßig die politisch-ideologischen, kadermäßigen und organisatorischen Voraussetzungen zu schaffen. Bereitgestellte Bürocomputer sind mit dem Ziel

der Erhöhung der Qualität und Effektivität der Arbeit umfassend zu nutzen und optimal auszulasten. Für die Arbeit mit neuer Bürotechnik sind vornehmlich junge Mitarbeiter zu gewinnen und zielstrebig vorzubereiten. Die Bildung entsprechender Jugendkollektive ist anzustreben.

19. Zur umfassenden Erfüllung der den Gerichten obliegenden Aufgaben ist die Einsatz- und Leistungsbereitschaft der Mitarbeiter weiter zu erhöhen.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n Gewerkschaftsorganisationen ist ein solches Arbeitsklima zu entwickeln, daß ein kollektives kameradschaftliches Zusammenwirken entsteht und sich jeder für die Erfüllung der Gesamtaufgaben verantwortlich fühlt. Initiativen von Arbeitskollektiven und Mitarbeitern, die sich in Verpflichtungen zur schnelleren und besseren Erfüllung der Aufgaben niederschlagen, sind zu wecken, zu fördern und durch moralische und materielle Maßnahmen zu stimulieren. Dabei sind Erfahrungsaustausche und Leistungsvergleiche sowohl am Gericht als auch unter Leitung des Bezirksgerichts innerhalb des Bezirkes als wichtige Formen der Leitung weiter zu entwickeln.

Berlin, den 16. Juli 1986

gez. Dr. Sarge
Präsident

gez. Heusinger
Minister

Rede des Stellvertreters des Vorsitzenden des Ministerrates und Minister der Justiz, Hans-Joachim Heusinger, zur Begründung des gemeinsamen Dokuments

Der XI. Parteitag der SED war ein Ereignis im Leben unseres Landes von überragender Bedeutung für die weiter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unserer Republik. Er war überzeugender Beleg für die Konstanz und Verlässlichkeit der gesamten Staatspolitik der DDR ebenso wie für ihre hohe Dynamik. Die erfolgreiche Bilanz, die gezogen werden konnte, und die Anerkennung, die die Arbeit der Justizorgane gefunden hat, erfüllten uns mit Stolz und sind Ansporn zu neuen Leistungen. Wie überall in den Arbeitskollektiven hat der Parteitag auch in den Justizorganen zu neuen Aktivitäten zur Stärkung der DDR geführt. Seine Beschlüsse werden die künftige Arbeit prägen und uns Maßstab für die kommenden Jahre sein.

In der gegenwärtigen Etappe kommt es darauf an, noch tiefer in den theoretischen Gehalt der Beschlüsse einzudringen und vor allem praktische Konsequenzen aus ihnen abzuleiten. Wir stehen nicht am Ende dieses Prozesses, sondern noch an seinem Anfang. Die weitere Auswertung der Parteitagsdokumente und die Umsetzung der daraus gezogenen Schlußfolgerungen bleiben unsere wichtigste Aufgabe.

Diesem Ziel dient das heute zu verabschiedende gemeinsame Dokument des Obersten Gerichts und des Ministeriums der Justiz. Von großem Vorteil für die weitere Arbeit erweist sich, daß wir uns auf vielfach bewährte Erfahrungen stützen und sie konti-

nuierlich weiterentwickeln können. Nun bedeutet Kontinuität keinesfalls, lediglich zur Tagesordnung zurückzukehren oder gar nur das Erreichte bewahren zu wollen. Dies wäre dem Wesen des Sozialismus fremd. Sie birgt vielmehr die Möglichkeit in sich, neue Aufgaben stets mit neuen Leistungen zu beantworten, und zwar in neuer und höherer Qualität. Wir verfügen dazu — wie es im Bericht des ZK auf dem Parteitag heißt — über ein „umfassendes Gesetzeswerk, das allen Bürgern die gleichen Rechte und Freiheiten garantiert, die Würde des Menschen schützt und sein Handeln im Sinne des Fortschritts fördert“.

Gesetze sind für uns die Grundlage der gerichtlichen Arbeit. Daß sie dem Entwicklungsstand der Gesellschaft weitgehend entsprechen, seit vielen Jahren stabil und vorausschauend sind, ist für die Tätigkeit der Gerichte von großem Vorteil. Jeder Mitarbeiter in den Justizorganen weiß, wieviel Kraft und Zeit es gekostet hat, z. B. das Zivilgesetzbuch oder das Arbeitsgesetzbuch zur festen Arbeitsgrundlage zu machen. Die Tatsache, daß unsere Tätigkeit auf bewährten und erfolgreichen Prinzipien fußt, beinhaltet gleichzeitig die Forderung in sich, auf allen Gebieten Langfristigkeit und Planmäßigkeit der Arbeit auf einer qualitativ höheren Stufe fortzusetzen. Im gemeinsamen Dokument sind für jeden nachlesbar die Schwerpunkte festgeschrieben, die auf lange Sicht unsere Arbeit bestimmen werden. Jeder Leiter und

jeder Mitarbeiter kann Fortschritte und Ergebnisse daran messen und sich persönlich daran orientieren.

Wir haben im Dokument als Hauptaufgabe der Gerichte erneut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Rechtsprechung formuliert. Rechtsprechung ist die erste und wichtigste Aufgabe. Von ihr hängt die Erhöhung der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unserer Arbeit entscheidend ab.

Auf einige im Dokument enthaltene Aufgaben möchte ich etwas ausführlicher eingehen.

Ich halte es für unabdingbar, daß wir die Rolle und Verantwortung der Gerichte und unseren Beitrag bei der Lösung der gesamtgesellschaftlichen Aufgabenstellung erhöhen und eine spürbare neue Qualität erreichen. Das ist eine der Hauptfragen überhaupt und beinhaltet wichtige politisch-ideologische Aspekte unserer Leitungstätigkeit.

Am eindringlichsten zeigt sich das in der Wahrnehmung unserer Verantwortung für den zuverlässigen Schutz unser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Rechtsordnung unter allen Bedingungen.

Wir müssen uns bewußt sein, daß die gesellschaftlichen Anforderungen der 80er Jahre und die sich vollziehenden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en immer neue Maßstäbe für unsere Arbeit setzen. Wir müssen die Dialektik beherrschen, daß wir selbst durch unsere Arbeit aktiv Einfluß auf diese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nehmen müssen.

Die grundlegenden Aufgaben der einheitlichen sozialistischen Staatsmacht zur Verwirklichung der Gesellschaftsstrategie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bestimmen unsere Funktion, und an ihnen müssen wir die Qualität und Effektivität unserer Arbeit messen. Die stärkere Einordnung unserer Tätigkeit in die Gesamtpolitik unseres sozialistischen Staates hat wichtige Konsequenzen für unsere Leitungstätigkeit.

Erstens müssen wir auf der Grundlage einer hohen Staatsdisziplin und in voller Wahrnehmung unserer Verantwortung die Lösung dieser gesamtstaatlichen Aufgaben stets im Blickpunkt unserer Arbeit haben. Das stellt hohe Anforderungen an die politisch-ideologische Arbeit der Leiter auf Bezirks- und Kreisebene, die Aufgaben klar zu machen und in der Arbeitsplanung ein solches Niveau zu erreichen, daß wir unseren Beitrag zur Verwirklichung der Gesamtpolitik in hoher Qualität und im festgelegten Umfang leisten können. Dieser Beitrag durchdringt alle Bereiche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angefangen von der qualitativen und quantitativen Erfüllung der Aufgaben der Rechtsprechung bis hin zur Vollstreckung, von der Rechtspropaganda und Rechtserziehung bis hin zur Rechtsantragstellentätigkeit.

Zweitens müssen wir unter strikter Wahrung der jeweiligen Verantwortung das Zusammenwirken mit den anderen Organen im Territorium verbessern, um der zunehmenden Komplexität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und der dabei zu lösenden Aufgaben Rechnung zu tragen.

Drittens müssen wir mit einem volksverbundenen und bürgernahen Arbeitsstil die Mitwirkung der Werktä-

tigen an der Lösung der staatlichen Aufgaben immer wirkungsvoller sichern, insbesondere deren Beitrag zur Gewährleistung von Ordnung, Sicherheit und Disziplin erhöhen.

Die Vervollkommnung unseres Arbeitsstils muß verbunden sein mit einem ständig steigenden politisch-fachlichen Niveau der Arbeit, mit einer weiteren Ausprägung der analytisch-konzeptionellen Arbeit und einer auf hohem Niveau stehenden Informations-tätigkeit als unabdingbare Erfordernisse der wissenschaftlichen Grundlagen unserer Leitung.

Einige im Dokument enthaltenen Aufgabenstellungen der Gerichte haben in Auswertung und Durchsetzung der Parteitagsmaterialien unter dem Aspekt der Gesamtpolitik eine besondere Bedeutung. Ich möchte dabei erstens den Blick auf unseren Beitrag zur Unterstütz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lenken. Die umfangreichen, komplexen und immer anspruchsvoller werdenden Aufgaben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zeigen sich insbesondere in den ökonomischen Prozessen. Dieser für jeden sichtbaren dynamischen Entwicklung muß in unserer Arbeit noch mehr Aufmerksamkeit gewidmet werden. Entscheidend ist dabei, daß wir bei allen Kadern — den Richtern wie den Sekretären — politisch-ideologische Klarheit über diese Aufgabenstellung schaffen und sie ständig vertiefen; daß wir sie befähigen, volkswirtschaftliche Prozesse zu verstehen und daß sie erkennen, wie sie in der täglichen Arbeit aktiv und fördernd auf sie einwirken können. Das geschieht durch eine qualifizierte Spruchpraxis, vor allem zum Schutz unserer Volkswirtschaft und des Volkseigentums, einschließlich der Maßnahmen zur Beseitigung der Ursachen und Bedingungen von Rechtsverletzungen, besonders auch auf dem Gebiet des Arbeitsrechts. Das gilt auch für die richtige Auswahl der vor erweiterter Öffentlichkeit zu verhandelnden Verfahren und die schnelle Realisierung der dem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Forderungen oder durch zielgerichtete rechtspropagandistische Aktivitäten. Damit ist natürlich keine Forderung nach einem ökonomischen Zusatzstudium verbunden. Über die ökonomischen Grundfragen aber muß bei jedem Funktionär Klarheit bestehen.

Die Aufgaben zur weiteren Entfaltung und Vervollkommn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als Hauptweg de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sind eng verbunden mit der weiteren Ausprägung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auch in unserem Leitungsprozeß. In diesem Zusammenhang möchte ich auf solche Forderungen in dem Dokument aufmerksam machen, wie

- die Ausprägung der Rolle der Schöffen in ihrer Rechtsprechungstätigkeit, also ihre weitere Qualifizierung vor allem bei der Wahrnehmung ihrer Verantwortung als unmittelbar von den Werkträgern gewählte Richter, oder auf
-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Arbeit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weil sich insbesondere über diese gesellschaftlichen Kräfte die wirksame Teilnahme der Bürger an der Rechtsprechung — und damit ein wichtiger Teil ihrer

Machtausübung — vollzieht und weil damit ein wichtiges verfassungsmäßiges Grundrecht verwirklicht wird.

Hier geht es aber auch um die immer engere Verbindung unserer Arbeit mit den gesellschaftlichen Aktivitäten im Kampf um Gesetzlichkeit, Ordnung, Sicherheit und Disziplin — besonders in den Arbeitskollektiven und in den Wohngebieten.

Damit komme ich zu einem weiteren Aspekt unserer Arbeit. Der XI. Parteitag hat den hohen Stellenwert der sozialistischen Kommunalpolitik erneut deutlich gemacht. Hier verwirklicht sich unmittelbar die Aufgabenstellung der Einheit von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Hier muß jeder Bürger auch unmittelbar spüren, daß ihm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Rechtssicherheit und Geborgenheit garantiert, daß er im Mittelpunkt der Arbeit de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steht und daß er seine Rechte und berechtigten Interessen geschützt und gesichert weiß.

In Durchsetzung des Gesetzes über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müssen wir also unseren Beitrag zur Realisierung der Gesamtpolitik auch und vor allem durch die Einordnung unserer Arbeit in die politische Aufgaben- und Problemstellung des Territoriums gewährleisten. Insbesondere die territorialen Programme zur Erhöhung von Gesetzlichkeit, Ordnung, Sicherheit und Disziplin geben uns dafür wichtige Orientierungen. Unseren Beitrag zu ihrer Umsetzung sehen wir vor allem in der Mitwirkung bei der Verallgemeinerung von Erfahrungen territorial entwickelter Führungsbeispiele und in der Unterstützung von Arbeitsgruppen, z. B. den Arbeitsgruppen Rechtspropaganda und Rechtserziehung der Kreisleitungen der SED und der FDJ. Das erfordert aber auch eine entschiedene Verbesserung der Analysen- und Informationsarbeit zunächst mit dem Ziel, den staatlichen Organen, Parteien und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im Territorium Informationen zu vermitteln. Es geht aber auch darum, zunehmend wirksamer Erfahrungen aus deren Tätigkeit für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gerichtlichen Arbeit — insbesondere der Leitungstätigkeit — zu nutzen.

Auf eine weitere Frage möchte ich in diesem Zusammenhang verweisen. Wir müssen unser Augenmerk darauf richten, die Rechtssicherheit als wesentliches Element der Wirksamkeit unserer Arbeit und als Bestandteil der sozialen Sicherheit und Geborgenheit immer weiter zu festigen und zu erhöhen. Damit leisten wir einen spezifischen Beitrag zur Herausbildung sozialistischer Beziehungen zwischen den Bürgern. Die Rechte und berechtigten Interessen der Bürger sind konsequent zu gewährleisten; das gilt vor allem für die Sicherung ihrer verfassungsmäßigen Grundrechte. Auch hiervon wird die gesamte Breite der gerichtlichen Arbeit angesprochen.

Natürlich steht die qualifizierte Rechtsprechung an erster Stelle. Sie berührt aber ebenso die Eingabenarbeit oder die Rechtsauskunft, die Vollstreckung oder die Rechtsantragstellentätigkeit.

Es muß uns dabei durch eine weitere Verbesserung in der qualitativen und quantitativen Aufgabenerfüllung immer besser gelingen, das Vertrauensverhältnis der

Bürger zum Gericht als einem Organ des sozialistischen Staates weiter zu festigen. Diese Bewährungsprobe muß jeder Kader täglich mit Auszeichnung bestehen, dann wird unsere Arbeit auch weiterhin und zunehmend mehr vom Vertrauen der Bürger getragen.

Zweitens: Das Dokument hebt die Abhängigkeit der Leistungen und der Ergebnisse jedes Gerichts von der Tätigkeit des Direktors hervor.

Leistung steht hier für Einsatzbereitschaft und Zielstrebigkeit, Intensität und Rationalität in der Arbeit der Richter, Sekretäre und der anderen Mitarbeiter bei der Bewältigung des Verfahrenseingangs. Ergebnis steht hier für Gesetzlichkeit, Gerechtigkeit und Wirksamkeit der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und ihrer Verwirklichung, für Wirksamkeit der rechtspropagandistischen und rechtserzieherischen Arbeit der Richter und Sekretäre und der Informationstätigkeit des Gerichts.

Leistungsverantwortung und -tätigkeit der Direktoren, besonders zur Qualifizierung der Rechtsprechung, umfassen beide Aspekte gleichermaßen. Sie voll wahrzunehmen erfordert von den Direktoren die Ausprägung ihrer Vorbildwirkung in ihrer politischen Führungstätigkeit im Gerichtskollektiv, in der eigenen richterlichen Arbeit und in ihrer gesellschaftspolitischen Arbeit.

Darauf stellt die Forderung des Dokuments ab, den Direktoren der Kreisgerichte besonderes Augenmerk zu widmen.

Ein Schritt in diese Richtung ist getan. Den Gerichten liegt die Dokumentation des Führungsbeispiels Kreisgericht Fürstenwalde vor. Die konstruktive Anwendung der mit der Dokumentation auf der Grundlage erprobter Grundsätze und Methoden ermittelten Erfahrungen dieses Kreisgerichts ist politischer Auftrag jedes Kreisgerichtsdirektors. Ihn zu erfüllen, schließt die kritische Überprüfung auch langjähriger Leitungstätigkeit ebenso ein, wie sie andererseits die schematische Übernahme ausschließt.

Die in der Dokumentation enthaltenen Anforderungen sind Maßstab guter Leitungstätigkeit, und somit kein absolutes Maß. Der Auftrag zur schöpferischen Umsetzung des Führungsbeispiels ist zugleich als Anregung zu seiner Weiterentwicklung aufzufassen. Erst damit kann es zu einem wirksamen Beitrag der Umsetz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in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werden, der deren Dynamik entspricht.

Diese Dynamik muß in erster Linie in einer weiteren Verbesserung der Qualität der Rechtsprechung in ihrer Einheit von gerichtlicher Entscheidung und Verwirklichung sichtbar werden. Das erfordert zunächst, daß die im erstinstanzlichen Verfahren getroffene Entscheidung dem Gesetz entspricht, richtig und überzeugend begründet ist. Große Aufmerksamkeit ist daher der politisch-juristischen und konzeptionellen Verfahrensvorbereitung zu widmen. Die notwendige Korrektur von erstinstanzlichen Entscheidungen beeinträchtigt die Autorität des Gerichts. Mit einer in erster Instanz richtig getroffenen und überzeugend begründeten Entscheidung lassen sich Ursa-

chen und Bedingungen von Rechtsverletzungen am schnellsten beseitigen. Die Propagierung eines mit Fehlern behafteten oder gar falschen Urteils bewirkt zweifellos das Gegenteil des angestrebten Zieles.

Bei einer Korrektur in der zweiten Instanz oder gar durch die Zentrale sind die Möglichkeiten einer hohen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nur noch in geringem Umfang vorhanden. Im Territorium widerspiegelt sich das Vertrauen der Bürger in ihren Staat, in die Gerechtigkeit und Gesetzlichkeit jeder Entscheidung der Justizorgane am unmittelbarsten. Dort steht der Richter, der Staatsanwalt, der Notar, der Rechtsanwalt oder der Sekretär dem Bürger direkt und persönlich gegenüber; dort vor allem begründet sich das Vertrauen der Bürger in die Justiz.

Unsere Eingabeanalysen zeigen, daß auch für die gerichtliche Arbeit der Grundsatz gilt, daß das Erreichte noch nicht das Erreichbare ist. Verstärk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die Fragen der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an Bedeutung gewinnen, und zwar aus einem sehr prinzipiellen Grund: Eine trotz vorliegender Voraussetzung nicht, nur teilweise oder zögernd durchgeführte Realisierung stellt auch die bestens begründete Entscheidung in Zweifel. Eine solche Arbeitsweise verletzt berechnete Interessen von Bürgern und unseres Staates, die zu schützen die Gerichte gerade berufen sind, und mindert die Rechtssicherheit.

Es gilt, den möglichen Verlust an Vertrauen in die sachliche Kompetenz der Gerichte sowohl zur Lösung des Konflikts, zur Kritik und zum Hinweis als auch zur Rechtspropaganda und Rechtserziehung auszuschließen. Uns ist die Aufgabe gestellt, das Vertrauen zu festigen, das letztlich Vertrauen zum sozialistischen Staat ist.

Das erfordert eine zügige und konsequente Durchsetzung gerichtlicher Entscheidungen auf allen Rechtsgebieten und an jedem Gericht. Die leitungsmäßige Einflußnahme auf die Erhöhung der Qualität der Rechtsprechung muß daher stets auch den Problemen ihrer Verwirklichung Rechnung tragen.

Dieses um so mehr, da durch den Anstieg der Vollstreckungsaufträge an vielen Gerichten die Belastung der Sekretäre und der in die Bearbeitung der Vollstreckungssachen einbezogenen Strukturbereiche erheblich zugenommen hat.

Vieles wird mit neuen Initiativen in diesem Bereich, mit der Verbesserung der Organisation der Arbeit und mit rationelleren Arbeitsweisen zu erreichen sein. Politisch-ideologische Einflußnahme und Erziehung und problemorientierte Leitungstätigkeit der Direktoren und Leitenden Sekretäre der Bezirks- und Kreisgerichte werden uns auch hier in die Lage versetzen, die quantitativ angestiegene Arbeit in einer neuen Qualität zu bewältigen.

Von herausragender Bedeutung bei der Bewältigung dieser Probleme wird es sein, wie schnell es uns gelingt, die mit der Mikroelektronik gegebenen Möglichkeiten der Verfahrensbearbeitung zu nutzen. Es hat sich gezeigt, daß das nicht nur eine Frage der technischen Voraussetzungen und der fachlichen Qualifizierung, sondern vielmehr auch eine der poli-

tisch-ideologischen Vorbereitung der Mitarbeiter darauf ist.

Noch in diesem Jahr werden voraussichtlich 52 Bürocomputer an den Gerichten im Einsatz sein, darunter an allen Bezirksgerichten. So sind wir bereits in der Lage, uns u. a. in Familienverfahren in spürbarem Maße von Routinearbeiten freizumachen und die manuelle Gerichtsstatistik insgesamt über Bürocomputer abzuarbeiten. Die notwendigen Voraussetzungen werden den Leitern der Abt. RAS im Herbst vermittelt werden.

1987 werden wahrscheinlich 100 Bürocomputer bei den Gerichten und Staatlichen Notariaten im Einsatz sein. Damit realisieren wir schon zu diesem Zeitpunkt die zunächst bis einschließlich 1990 geplante Ausstattung. Das erfordert bereits jetzt, mit der notwendigen politisch-ideologischen und fachlichen Vorbereitung zu beginnen. Im nächsten Monat werden wir deshalb verstärkt weitere Ausbildungslehrgänge, zunächst mit den Bediensteten, später auch mit den Nutzern durchführen. Anspruchsvolle Forderungen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von der Partei- und Staatsführung an uns gestellt. Das schließt ein, vom Zeitpunkt der Bereitstellung der Bürocomputer auf ihre mehrschichtige Auslastung zu orientieren. In der volkseigenen Industrie wird zum Beispiel gegenwärtig eine kalendertägliche Auslastung von 13 Stunden realisiert. Die Tatsache, daß wir relativ kurzfristig mehr als 1 500 Mitarbeiter auf die mit der Einführung dieser neuen Technik in der Justiz verbundenen neuen Aufgaben einzustellen haben, macht den Umfang dieser Arbeit deutlich, die grundlegende Änderungen in allen Strukturbereichen der Gerichte mit sich bringen wird.

Hervorgehoben werden kann und muß jedoch:

Die Einführung dieser Technik dient allen. Sie befreit die Mitarbeiter der Justiz weitgehend von schematischer, routinehafter Arbeit. Sie setzt die Zeit frei, an der es Richtern, Notaren und Sekretären manchmal auch objektiv mangelt, den Anliegen der Bürger in der Rechtsauskunft, in der Rechtsantragstelle und in den Verhandlungen die ausreichende Aufmerksamkeit zu widmen. Nicht selten erwecken wir — in Eingaben wird darüber berichtet — bei den Bürgern gerade das Gefühl, keine Zeit für sie zu haben, ihrem Vorbringen deshalb nicht das gebotene Gehör zu schenken. Wir gewinnen sicherlich auch Zeit für die konzeptionelle Vorbereitung der Verfahren, wie auch für Maßnahmen der Wirksamkeit der Rechtsprechung, für Rechtspropaganda und -erziehung, insbesondere unter der Jugend, und vor allem für die unabdingbare, für jeden wichtige, eigene Weiterbildung.

Drittens: Wenn im Bericht an den XI. Parteitag gesagt wurde, „daß die sich heute und künftig vollziehenden Prozesse in unserer Gesellschaft höhere Ansprüche an die Verhaltensweisen der Menschen, ihre Aktivität, ihr Verantwortungsbewußtsein, ihre schöpferische Tätigkeit und Kollektivität, an solche Eigenschaften, wie Disziplin, Pflichtbewußtsein, Zuverlässigkeit und Gemeinschaftssinn stellen“, dann gilt das nicht allein für die kommunistische Erziehung der Jugend, sondern gerade auch für das Berufsethos der Mitarbeiter der Gerichte und Staatlichen Notariate. Davon leiten

sich die im Dokument gestellten Anforderungen an die Arbeit mit den Kadern ab. Erfolgreiche Kaderarbeit zu leisten, heißt immer, die Perspektive der Entwicklung im Blick zu haben. Auf der Kaderkonferenz und in früheren Direktorentagungen haben wir dazu schon oft die Aufgaben diskutiert. Zwei Dinge möchte ich davon noch einmal hervorheben, weil sie von ausschlaggebender Bedeutung sind.

Das ist die Notwendigkeit, auf allen Leitungsebenen die Verantwortung für die klassenmäßige Stärkung unserer Organe durch die Gewinnung geeigneter Nachwuchskader für das juristische Studium, vor allem solcher mit eigenen Produktionserfahrungen, noch besser wahrzunehmen: Das ist die Arbeit mit der Kaderreserve. Hier ist von allen Leitern zu erkennen, daß Reservekaderarbeit kein ausschließlich zentrales Problem ist. In gemeinsamer Arbeit mit den Bezirksgerichten müssen wir sichern, daß die geeigneten jungen Kader zielgerichtet entwickelt und rechtzeitig auf die Übernahme von Leitungsfunktionen vorbereitet werden.

Das politische und fachliche Niveau der Kader ist entscheidend für die weitere Verbesserung der Qualität der gesamten gerichtlichen und notariellen Tätigkeit und für eine wahrhaft sozialistische Rechtskultur. Eine weitschichtige und konsequente politisch-ideologische Arbeit mit den Mitarbeitern in unseren Dienststellen ist dafür die wichtigste Voraussetzung. Sie muß ausgerichtet sein auf die Herausbildung und Festigung solcher Haltungen und Fähigkeiten, wie enge Verbundenheit mit den Werktätigen, hohes Staatsbewußtsein, Gesetzestreue, Gerechtigkeit und Feinfühligkeit im Umgang mit den Menschen. Unsere Mitarbeiter müssen sich durch eine verantwortungsbewußte Handhabung von Recht und Gesetz auszeichnen. Solche Kader immer wieder heranzubilden und zu erziehen — vor allem im Prozeß der täglichen Arbeit — ist eine ständige Aufgabe staatlicher Leitungstätigkeit und gesellschaftlicher Einflußnahme. Zweifellos sind in den Gerichten und Staatlichen Notariaten erfahrene und bewährte Kader tätig, die eine erfolgreiche Arbeit leisten. Wir verfügen über Kader, die große Leistungsbereitschaft zeigen und gewillt sind, sich den objektiv wachsenden Anforderungen zu stellen. Aber auch erprobte Mitarbeiter sind gegen Mängel und Fehler in der Arbeit nicht gefeit. Außerdem verändern sich immer wieder unsere Arbeitskollektive; bewährte Kader scheiden aus, junge und entwicklungsfähige Kolleginnen und Kollegen kommen neu zu uns. Das macht es notwendig, gemeinsam mit den Partei- und Gewerkschaftsorganisationen für eine gute politisch-ideologische Arbeit mit ihnen zu sorgen, um prinzipielle Grundhaltungen zur Funktion eines Richters, Notars, Sekretärs oder Mitarbeiters der Justiz mit allen damit verbundenen Anforderungen herauszubilden und zu festigen.

Wir müssen vor allem durch größeren ideologischen Gehalt und mit mehr Wissenschaftlichkeit in der Aus- und Weiterbildung höhere Anforderungen an die Kader stellen. Gemeinsam haben wir darauf Einfluß zu nehmen, daß jegliche „Zufriedenheit“ mit mittelmäßigen Arbeitsergebnissen überwunden und durch sinnvolle Anwendung der moralischen und materiellen Stimulierungsmöglichkeiten das Streben nach Spitzenleistungen gefördert wird. Die Erfahrungen belegen, die Kader entwickeln sich am besten in einer schöpferischen Arbeitsatmosphäre, die von gegenseitigem Vertrauen, aber auch von freimütiger Kritik gekennzeichnet ist. Wo solch ein Arbeitsklima für die gesellschaftlichen Beziehungen eines Kollektiv bestimmend ist, werden die Leistungen der Besten als Maßstab für jeden einzelnen anerkannt. Dort halten sich überholte oder uneffektive Arbeitsmethoden nicht lange. Neuem und Besserem steht man aufgeschlossen gegenüber. Junge und noch weniger erfahrene Mitarbeiter übernehmen in solchen Kollektiven gern die Arbeitserfahrungen bewährter Kader. Doch all das vollzieht sich nicht im Selbstlauf, sondern muß zielstrebig geleistet und organisiert werden. Die Arbeit am Führungsbeispiel Kreisgericht Fürstenwalde hat diese Erkenntnis nachhaltig bekräftigt.

Auch die Mitarbeiter der Justizorgane des Kreises Eisenach und alle jene Kollektive, die inzwischen ihrem Aufruf gefolgt sind und mit neuen Initiativen und Verpflichtungen ihren ganz spezifischen Beitrag zur Umsetzung der Parteitagebeschlüsse erbringen wollen, gehören zu dem großen Kreis derer, die aufgeschlossen und schöpferisch die Lösung der bevorstehenden Aufgaben in Angriff nehmen. Überall dort, wo wir uns in der Leitungstätigkeit konkret den Kadern zuwenden, wo wir uns für ihre Belange einsetzen und uns auch um die Lösung persönlicher Probleme kümmern, wo wir ihnen helfen, sich zu entwickeln und zu qualifizieren, wo wir sie fördern und fördern, werden herausragende Leistungen erzielt.

Dort fühlt man sich wohl und sind stabile Arbeitskollektive in der Lage, mit den vorhandenen Kräften die Aufgaben in hoher Qualität und Effektivität zu erfüllen.

Lassen Sie mich meine feste Überzeugung zum Ausdruck bringen, daß wir mit der Kraft der Kollektive, mit schöpferischem Elan, mit vielfältigen Initiativen und Ideen die anspruchsvollen Aufgaben, die sich aus den Beschlüssen des Parteitages ergeben, ehrenvoll erfüllen werden.

Dazu wünsche ich uns allen viel Erfolg.

Rede des Präsidenten des Obersten Gerichts der DDR, Dr. Günter Sarge, zur Begründung des gemeinsamen Dokuments

Uns hat der Wille zusammengeführt, unsere strategische Konzeption für die Arbeit der Gerichte unseres Landes bis zum Jahre 1991 gemeinsam abzustecken und damit Platz, Ziele und Inhalt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aus den Beschlüssen des XI. Parteitag des SED zu bestimmen. Ich stimme voll der Einschätzung des Ministers der Justiz, Kollegen Hans-Joachim Heusinger, zu, daß sich in diesem Dokument erneut die Absicht beider Organe manifestiert, den Gerichten eine verständliche, verbindliche und abgestimmte Orientierung für die nächsten Jahre zu geben.

Unsere gemeinsame Verantwortung besteht gerade darin, den Gerichten eine die verschiedenen Arbeitsgebiete umfassende und miteinander verzahnte Anleitung zu überreichen, die keinen Dualismus in der Arbeit zuläßt.

Dabei können wir von dem bereits nach dem X. Parteitag praktizierten bewährten Weg ausgehen.

Unser jetzt vorliegendes Dokument wurde nach dem Parteitag gründlich beraten. Die nunmehr vorliegende Fassung ist das Ergebnis vieler Überlegungen und Diskussionen.

Dabei konnten wir an die Erfahrungen und Analysen der Jahre 1981—1985 anknüpfen. Insbesondere fanden

- der Beschluß des Sekretariats des ZK der SED von 1984 zur Berichterstattung des Kreises Annaberg, der nach wie vor unsere Arbeit mitbestimmt;
- die Beratung mit den Mitarbeitern der Bezirks- und Kreisleitungen der Partei und der Parteisekretäre in Kleinmachnow;
- die Einsätze, Standpunkte und sonstige Maßnahmen, die aus den gemeinsamen Jahresplänen der zentralen Justiz- und Sicherheitsorgane durchgeführt wurden;
- die Ergebnisse der Kommission Staat, Recht, Demokratie zur Vorbereitung des XI. Parteitages;
- die Ergebnisse der staats- und rechtswissenschaftlichen Konferenz vom Juni 1985;
- die 14 Plenartagungen des Obersten Gerichts sowie die Analysen und Einschätzungen der Bezirke.

Das gibt uns das Recht, von einem gesicherten Erkenntnisstand die Lage bei der Rechtsverwirklichung im Lande einzuschätzen und ausgewogene Schlußfolgerungen für die auf der Grundlage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weiterzuführenden Arbeiten zu ziehen.

Soweit es sich um die Rechtsprechung und ihre Leitung handelt, gehen wir von folgenden Hauptlinien aus:

Erstens: Die Haupttätigkeit der Gerichte ist die Rechtsprechung. Diese fundamentale Aussage steht am Anfang aller Aufgaben. Hierbei geht es erstrangig um die Bestimmung des Platzes der Gerichte im System staatlicher Machtausübung. Diese Prämisse ist nicht aus der Not geboren, sondern Grundaufgabe unseres sozialistischen Gerichtswesens. Alle anderen Fragen sind hiervon abzuleiten oder ihr unterzuordnen. Das Rechtsprechen im Namen des Sozialismus ist eine der verantwortungsvollsten Aufgaben, die der sozialistische Staat zu vergeben hat, geht es doch vor allem um die Gestaltung der Beziehungen Staat—Bürger, Bürger—Bürger und um eine auf dem Gesetz beruhende Lösung menschlicher Konflikte.

Selbstverständlich übersehen wir nicht die wachsende Größe der Inanspruchnahme unserer staatlichen Gerichte. Über 200 000 Verhandlungen im Gerichtssaal im Jahr, doppelt soviel und mehr Zahlungsverurteilungen und Vollstreckungssachen, eine halbe Million Rechtsauskünfte, dazu die nicht geringen Maßnahmen der Rechtsklärung usw. — das alles ist von rund 1 300 Richtern in unserem Lande zu bewältigen. Im Durchschnitt hat jeder Richter etwa pro Jahr 1 000 Bürger direkt oder indirekt zu betreuen. Dabei kommt die Hauptlast auf die Genossen — oft unsere Jüngsten —, die in den Kreisen arbeiten. Bei alledem gibt es keine tolerierten Abstriche an der Qualität der Rechtsprechung. Das Spiegelbild der Arbeit jedes Richters ist die Qualität des Einzelfalles und die Summe seiner Fälle.

Der Bürger, der uns gewählt hat, muß und soll wissen, daß sein Fall, sein Anliegen in guten Händen liegt, daß der entscheidende Richter gesetzlich richtig und gerecht entscheidet.

Daher ist die von uns vertretene Lösung, daß bereits die erste Entscheidung die richtige zu sein hat, unbedingt aufrechtzuerhalten, allerdings mit dem Zusatz, daß die zweite Instanz — so wie wir auf der 10. Plenartagung des Obersten Gerichts es betont haben — die Sicherheit geben muß, daß jeder Fehler entdeckt und korrigiert wird.

Zunehmend werden wir auch — wie bereits mit der 4. Plenartagung des Obersten Gerichts geschehen — auf die Erhöhung der Kultur der Gerichtsarbeit drängen. Wir verstehen darunter vor allem die unbürokratische, verständnisvolle Arbeit mit unseren Menschen.

Das betrifft auch die Arbeit mit den Eingaben, die Klageaufnahme, die Sprechstundenarbeit usw. Bei allen unseren Tätigkeiten sollten wir uns persönlich darüber Rechenschaft geben, wie wir zur Festigung des Vertrauens unserer Menschen zu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beigetragen haben.

Zweitens: Das Leben hat uns gelehrt, daß wir zu einer immer größeren Verzahnung der Rechtsgebiete kommen müssen. Das zeigt sich ganz besonders in den außenpolitischen Belangen, beim Schutz der inneren

Sicherheit und der Gewährleistung der öffentlichen Ordnung, bei unserem gewachsenen Beitrag zur Unterstützung der ökonomischen Strategie sowie beim Schutz des Lebens, der Gesundheit, der Freiheit und Würde sowie des Eigentums der Bürger.

Das betrifft selbstverständlich auch unsere Maßnahmen zur Leitung der Rechtsprechung.

Verzahnung heißt nicht Gleichstellung. Nach wie vor haben die Strafverfahren unsere besondere Aufmerksamkeit.

Von den Straftaten gehen die Gefahren für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für das Zusammenleben der Bürger und für den Einzelnen im besonderen Maße aus. Im Charakter der Straftaten und ihren Dimensionen spiegelt sich auch der Zustand eines Landes wider.

Wir haben alle Veranlassung — aufbauend auf dem guten Stand in der DDR — weitere Anstrengungen zur Zurückdrängung der Kriminalität und ihrer Folgen zu unternehmen.

Besondere Beachtung schenken wir dabei

- den Strafverfahren mit Untersuchungshaft;
- den Verfahren gegen Jugendliche;
- den Rückfallstrafsachen;
- solchen Verfahren, die von der Art ihrer Begehung bzw. ihren Folgen her für die sozialistische Gesellschaft besonders schädlich sind;
- den Verfahren mit Ausländerbeteiligung.

Drittens: Wir sind auch in den nächsten Jahren für eine Kontinuität in der Rechtsprechung der Gerichte.

Das betrifft vor allem das Strafrecht. Unsere Einschätzungen besagen, daß wir auf den Stand, die Bewegung und das Profil der Straftaten in der DDR durchweg angemessen und erfolgreich reagieren. Alles Bewährte soll erhalten und vervollkommen werden.

Kontinuität heißt nicht Erstarrung. Jähe Wendungen — vor allen in der Klassenauseinandersetzung — sollen uns nicht unvorbereitet treffen. Auf neue Erfordernisse in der Ökonomie, in der staatlichen Sicherheit, der öffentlichen Ordnung und beim Schutz der Bürger müssen wir uns rechtzeitig einstellen. Auf bestimmten Gebieten des Kampfes gegen die Kriminalität, wie z. B.

- die Rückfallkriminalität,
- das Rowdium,
- die Gewaltstraftaten,
- die Wohnungseinbrüche,
- die Asozialität,
- die Korruption und Spekulation

haben wir unsere Maßnahmen — nach gründlicher Analyse und Abstimmung — den Gegebenheiten anzupassen.

Wert werden wir auch auf die öffentliche Meinung zu legen haben, um stets glaubwürdig zu sein. Unsere Partei, unser Staat und auch unsere Bürger sollen sich darauf verlassen können, daß der Schutz vor strafbaren Handlungen nicht abgebaut, sondern ausgebaut wird.

Viertens: Die Durchsetzung der Gesetzlichkeit in jeder Sache, in jedem Verfahren ist elementare Pflicht jedes Richters. Bei der Erforschung der Wahrheit durch das Gericht muß der Weg dazu selbst wahr sein. Im September 1984 haben wir aus gegebenem Anlaß unsere prinzipielle Auffassung zu dieser Frage dargelegt. Hier gibt es keine Abstriche. Das Bild der Rechtssicherheit in unserem Lande — das auch international anerkannt gut ist — hängt wesentlich von den Handlungen und vom Gesamtbild der Gerichte bei uns ab.

Deshalb haben wir dieser Frage und der Stärk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im Dokument solche Bedeutung beigemessen.

Die Formel, die wir gemeinsam gefunden haben: Gute, kameradschaftliche Zusammenarbeit mit den anderen Justiz- und Sicherheitsorganen bei voller Wahrnehmung der Eigenverantwortung jedes Organs hat sich im Leben bewährt und respektiert hinsichtlich der Gerichte das Verfassungsgebot der Unabhängigkeit der Richter.

Wir werden weitere Anstrengungen zu unternehmen haben bei der

- Qualifizierung des Beweisverfahrens in Strafsachen;
- Profilierung des Rechts auf Verteidigung;
- Gewährleistung des demokratischen Mitwirkungsrechts der Bürger und der Öffentlichkeit der Verfahren;
- Kultivierung der Prozesse und Dokumente.

Gesetzlichkeit im kleinen wie im großen ist ein Wesensmerkmal des Sozialismus. Sie ist ein Schlüssel unseres Erfolges, gehört zur Qualität des Lebens im Sozialismus und versetzt uns in die Lage, in der Frage der Darstellung der Verwirklichung der Menschenrechte in unserem Lande noch mehr in die Offensive zu gehen.

Fünftens: Mit dem Anerkenntnis, daß die Haupttätigkeit der Gerichte die Rechtsprechung ist und bleibt, verbindet sich das Erfordernis nach der weiteren Qualifizierung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ist eine politische Führungsfrage ersten Ranges, geht es doch um die inhaltliche Bestimmung der Tätigkeit der Gerichte. Wir haben die prinzipielle Formulierung der 2. Plenartagung des Obersten Gerichts in das gemeinsame Dokument aufgenommen, daß die effektive Leitung der Rechtsprechung die konsequente Durchsetzung des Prinzips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 auch im sozialistischen Gerichtswesen bedingt. Hier besteht kein Widerspruch zu dem Prinzip der Unabhängigkeit der Richter. Im konkreten Einzelfall haben die beteiligten Richter in der Regel einen breiten Raum; in der generellen Linie der Rechtsprechung

haben sie den zentralen Beschlüssen, Richtlinien und Orientierungen zu folgen. Anders sind die Einheitlichkeit und der Gleichheitsgrundsatz nicht zu verwirklichen.

Uns geht es immer wieder um die sinnvolle Verbindung der zentralen Vorgaben mit den Gegebenheiten im Territorium.

Die Schlagkraft unserer Gerichte hängt wesentlich von der disziplinierten und schnellen Umsetzung der zentralen Orientierungen bis zu jedem Richter ab.

Wir sind uns völlig darüber im klaren, daß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durch das Oberste Gericht weiter qualifiziert werden muß.

Im ersten Teil der heutigen Beratung — der 1. Plenartagung des Obersten Gerichts — habe ich bereits die Vorstellung zur weiteren Profilierung der Arbeit von Plenum und Präsidium dargelegt. Dazu dient auch der bis 1991 terminierte Plan der Plenararbeit, den wir heute beschlossen haben.

Das Kampfprogramm unserer Grundorganisation ist vor allem auf den Ausbau der Fähigkeit des Obersten Gerichts gerichtet,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noch besser zu beherrschen. Dazu haben wir auch im Zuge der Neuwahl eine Reihe von Maßnahmen und Veränderungen beschlossen.

Ein neuer Zivilsenat wurde gebildet und das Patent- und Urheberrecht dort eingeordnet. Das Präsidium hat eine neue Geschäftsverteilung der Senate beschlossen. Eine zentrale Grundsatzabteilung wurde gebildet und wird alle Potenzen dafür einsetzen, die Aufgaben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zu unterstützen.

Gegenwärtig sind wir dabei, zusätzlich eine Kontrollgruppe von vier Richtern aufzubauen, die uns insbesondere bei der Vorbereitung der Plenartagungen, bei der Analyse der Rechtsprechung und der Kontrolle deren Ergebnisse nützlich sein soll.

Alles in allem geht es uns um eine höhere Effektivität unserer Leitungsmaßnahmen, um zu jeder Zeit eine Rechtsprechung der Gerichte zu sichern, die der aktuellen Politik der Partei entspricht, dieser dienlich

ist und die gewährleistet, daß Recht und Gesetz nach einheitlichen Maßstäben im ganzen Lande verwirklicht werden.

An dieser Stelle sprach am 18. Juni d. J. das Mitglied des Politbüros, der Sekretär des ZK der SED und Stellvertreter des Vorsitzenden des Staatsrates der DDR, Genosse Egon Krenz, zu uns.

Er sagte u. a.:

„Wir sind überzeugt, daß das Oberste Geri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ch weiterhin alles Erforderliche unternimmt, um als Garant der Gesetzlichkeit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Rechtsprechung der Gerichte, geführt von unserer marxistisch-leninistischen Partei, im engen Zusammenwirken mit den anderen Sicherheitsorganen die vom XI. Parteitag gestellten Aufgaben zur weiteren Gestaltung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erfüllen wird.“

Das sind verpflichtende Worte. Das vom Genossen Krenz für das Oberste Gericht Gesagte gilt ebenso für die Leitungstätigkeit der Bezirksgerichte und Militär-obergerichte. Diese Gerichte, ihre Direktoren bzw. Leiter wie auch ihre Kollektivorgane sind für die Umsetzung und selbständige Herausarbeitung der Rechtsprechungsanforderungen äußerst wichtige Glieder im Gerichtssystem. Ich glaube, daß wir das in unserem Dokument deutlich gemacht haben.

Wir stehen am Anfang der Umsetzung der Beschlüsse des im Leben unseres Volkes so bedeutsamen XI. Parteitages der SED.

Ich meine, daß wir diesen Anfang mit einem gemeinsamen Dokument, mit einer gemeinsamen Strategie, mit einer gemeinsamen Orientierung gut begonnen haben.

Nach der Annahme des Dokuments wird es unser ganzes Sinnen sein, diese Aufgabenstellung mit Leben zu erfüllen. Dazu besitzen wir — unter Führung der Partei der Arbeiterklasse — alle Voraussetzungen. Die Gerichte unseres Landes — dessen bin ich gewiß — werden diesen Auftrag gut annehmen und erfolgreich verwirklichen.

Diskussionsbeitrag des Genossen Siegfried Heger, Sektorenleiter in der Abteilung Staats- und Rechtsfragen des ZK der SED

In meinem Beitrag möchte ich noch einmal die Einschätzung des XI. Parteitages hervorheben, daß die Justizorgane einen anerkannten Beitrag zur Festig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leisten. Damit bringt unsere Partei den Stolz auf das auch von den Justizorganen seit dem X. Parteitag Geleistete zum Ausdruck. Diese Wertschätzung der Arbeit wurde von unseren Genossen auch als Verpflichtung verstanden.

Wir können heute feststellen, daß in den letzten drei Monaten nach einem gründlichen Studium des Rechenschaftsberichts des ZK an den Parteitag und der anderen Dokumente eine zielstrebige Arbeit zur

schöpferischen Verwirklichung der Beschlüsse des Parteitages im Obersten Gericht und im Ministerium der Justiz sowie in den nachgeordneten Gerichten geleistet worden ist.

Das vorliegende gemeinsame Dokument enthält eine klare Aufgabenstellung für die Bezirks- und Kreisgerichte, wie sie mit dem Beschluß des Politbüros vom 8. April 1986 für den qualitativ neuen Abschnitt in Verwirklichung des Programms unserer Partei bei der Gestaltung der entwickelten sozialistischen Gesellschaft der DDR gefordert wird.

Dem gemeinsamen Herangehen des Ministeriums der Justiz und des Obersten Gerichts bei der Erarbeitung

der Aufgaben, der gemeinsamen Diskussion mit den Praktikern und der damit erreichten weiteren Vertiefung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sarbeit gebührt hohe Anerkennung. Daran haben die leitenden Genossen und die Parteileitungen unserer Grundorganisationen besonderen Anteil.

Ich möchte gleichzeitig den Entschluß unterstützen, gemeinsam an die weitere Erläuterung, an das Klarmachen der Aufgaben zu gehen und die Realisierung des Dokuments als gemeinsame ständige Leitungsaufgabe entsprechend der jeweiligen Verantwortung zu betrachten.

Wir sind gewiß, daß unter zielstrebigem und umsichtiger Leitung des Ministeriums der Justiz und des Obersten Gerichts die heute begründeten Aufgaben zur Verwirklich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durch die kampfstarken und zuverlässigen Kollektive der Gerichte in den Bezirken und Kreisen — unter Führung der Grundorganisationen — erfüllt werden. Unsere Gewißheit ist darin begründet, daß unsere Direktoren und Richter und alle Mitarbeiter der Gerichte in allen Jahren bewiesen haben, daß sie die Parteibeschlüsse jederzeit und unter allen Bedingungen im kämpferischen Geist sachkundig im Leben durchsetzen.

Die bewährte aktive sozialistische Gemeinschaftsarbeit zwischen dem Ministerium der Justiz und dem Obersten Gericht unter Wahrung der verfassungsrechtlichen Verantwortung, das auf der Grundlage der Parteibeschlüsse abgestimmte und koordinierte Vorgehen an der gemeinsamen Front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dient der Stärkung unserer Arbeiter- und Bauern-Macht.

Einige Gedanken zu den inhaltlichen Aufgaben:

Erstens: Wir sind gut beraten, wenn wir bei der Verwirklichung des Dokuments die Beschlüsse des Parteitages, insbesondere den Rechenschaftsbericht, als ständiges Arbeitsmaterial nutzen und sichern, daß alle Mitarbeiter stets von der Gesamtpolitik unserer Partei ausgehen.

Dazu gehört auch, daß wir den Beschluß des Sekretariats des ZK zum Bericht der Kreisleitung Annaberg in seiner Gesamtheit im Auge behalten, weil aus jedem Abschnitt der eigenständige Beitrag jedes Genossen und Mitarbeiters immer wieder neu abzuleiten ist.

Zweitens: Der bisher gewährleistete zuverlässige Schutz unserer sozialistischen Staats- und Gesellschaftsordnung muß jeden Tag neu gesichert werden. Bei der richtigen Einschätzung der neuen und raffinierten Angriffsrichtungen des Klassengegners ist besondere Unterstützung durch die zentralen und bezirklichen Justizorgane notwendig, damit auf allen Rechtsgebieten der gerichtlichen und notariellen Tätigkeit klassenmäßige rechtspolitische Entscheidungen getroffen werden.

Drittens: Die Verwirklichung der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als Hauptkampfgebiet verlangt von uns allen in den nächsten Jahren eine große schöpferische Arbeit. Im Dokument wird dem Schutz der Volkswirtschaft und des sozialistischen Eigentums sowie dem Arbeits-, Brand- und Havarieschutz besondere Aufmerksamkeit geschenkt; alle Rechtsgebiete werden

angesprochen. Die vorbeugende Arbeit muß speziell auf diesem Gebiet weiter verstärkt werden. Wir müssen bemüht sein, die Motive der Täter, alte Denkgewohnheiten, konkreter aufzudecken und mit der Gerichtskritik nicht zahm zu sein. Die Gerichte sollten ihre erzieherische Funktion wirksamer gestalten. Rechtsprechung, Vorbeugung und Öffentlichkeitsarbeit müssen als Einheit konsequenter durchgesetzt werden.

Wie wir mit unserem Recht und der spezifischen Tätigkeit der Gerichte die neuen Aufgaben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Revolution, die Einführung der Schlüsseltechnologien noch wirksamer fördern können, das ist eine Aufgabe, der wir uns mit all unseren Kräften zuwenden müssen. Dabei brauchen wir eine enge Zusammenarbeit mit den Fachleuten der Wirtschaft und benötigen wir die Vervollkommnung der Kenntnisse über die sich rasch vollziehende ökonomische Entwicklung.

Viertens: Im Rechenschaftsbericht an den XI. Parteitag hat Genosse Erich Honecker festgestellt: „Die immer umfassendere Einbeziehung aller Bürger in die Lösung der öffentlichen Angelegenheiten gehört zu den bedeutendsten demokratischen Traditionen unseres Staates.“ Unsere gute Rechtspolitik im Interesse und zum Wohle des ganzen Volkes kann nur im engsten Verhältnis zu den Menschen, gemeinsam mit ihnen verwirklicht werden.

Es ist nur zu unterstützen, wenn die neue Qualität der Zusammensetzung der Schöffen genutzt werden soll, um ihre Wirksamkeit qualitativ weiter zu erhöhen.

Weil die Volksvertretungen die wichtigste Form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sind, sollte eine bedeutende Aufgabe der nächsten Jahre sein, die Zusammenarbeit mit den Volksvertretungen und ihren Organen so zu gestalten, daß bei der Verwirklichung des Gesetzes über die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die Rechtssicherheit und die strikte Einhaltung der Gesetze und anderen Rechtsvorschriften des Arbeiter- und Bauern-Staates auf höherem Niveau gewährleistet werden.

Fünftens: Die verantwortungsbewußte Handhabung von Recht und Gesetz nach dem Grundsatz, daß alle Bürger vor dem Gesetz gleich sind, ist eine Frage des Berufsethos jedes Richters. Nur gesetzliche und gerechte Entscheidungen sichern eine bürgernahe Arbeit. Nur sie tragen zur weiteren Festigung des Vertrauensverhältnisses zwischen Volk und Partei sowie Staat bei. Ich betone deshalb noch einmal, der Arbeit mit dem Prozeßrecht besondere Aufmerksamkeit zu schenken.

Wir wissen, daß die Verwirklichung der heute beratenden Aufgaben die Entwicklung der politischen Aktivität und der Kampfatmosphäre in allen unseren Partei- und Dienstkollektiven nach dem Beispiel Eisenach notwendig macht. Wir sollten immer für ein richtiges Verhältnis zwischen Optimismus und Realismus sorgen.

Im Namen der Abteilung Staats- und Rechtsfragen des ZK wünsche ich viel Erfolg bei der Umsetzung der anspruchsvollen Aufgaben!

Diskussionsbeitrag des Direktors des Bezirksgerichts Rostock, Inge Kersten

Darstellungen erster Auswertungen des XI. Parteitages und der Umsetzung seiner Beschlüsse müssen von den Ergebnissen ausgehen, die wir in Vorbereitung des Parteitages erzielt haben. Da diese aber bereits Gegenstand wiederholter Berichterstattungen waren, möchte ich sie an dieser Stelle nur stichwortartig aufzählen:

Wir haben festgestellt, daß

- alle Kollektive der Kreisgerichte und Staatlichen Notariate ihre Arbeit auf eine gut durchdachte und kontrollfähige Verpflichtungsbewegung stützten, die auf persönlichen und kollektiven Gesprächen und Auseinandersetzungen über die erreichten und die möglichen Leistungen der Einzelnen fußen;
- gute Leistungen und fortgeschrittene Erfahrungen, besonders vom Kreisgericht Rostock-Stadt, schnell an allen Kreisgerichten verallgemeinert wurden und dadurch trotz vielfältig komplizierter Bedingungen optimale Leistungen erreicht werden konnten;
- unter Führung der Parteiorganisation zielstrebig und beharrlich an der Umsetzung des Sekretariatsbeschlusses des ZK der SED zur Berichterstattung der Kreisleitung Annaberg gearbeitet und dabei in Realisierung der Kampfprogramme der jeweiligen Grundorganisation eine größere Wirksamkeit der Verfahren, stärkere Orientierung auf ökonomische Schwerpunkte und weitere Ausprägung der Bürgernähe unserer Arbeit erreicht wurde;
- durch gründlichere analytische Arbeit und stärkere Einbeziehung der Kreisgerichtsdirektoren die Leitung und Anleitung der Rechtsprechung verbessert werden konnte;
- die Arbeit mit den Schöffen und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inhaltlich verbessert und systematischer gestaltet worden ist;
- in diesem Prozeß die gesamte Leitungstätigkeit in unserem Bezirk einen spürbaren Qualitätszuwachs, nicht zuletzt auch in erster Umsetzung der aus Fürstenwalde übermittelten Erkenntnisse erfahren hat.

Das Tempo der Entwicklung des gesamten gesellschaftlichen Lebens und die Vielfalt der innen- und außenpolitischen Ereignisse, dazu die unverminderte Arbeitsbelastung, ließen sowohl während als auch nach dem Parteitag keinerlei Pausieren zu, sondern verlangten von uns ständige Höchstleistungen. Mit großer Energie und Einsatzbereitschaft wandten sich deshalb besonders die Richter des Bezirksgerichts der Wahlvorbereitung zu, und sie wurden dabei vielfältig durch die Genossen der Kreisgerichte unterstützt bzw. durch die Durchführung eigener Veranstaltungen ergänzt. Die 19 Richter des Bezirksgerichts haben sich in Vorbereitung der Wahlen 232mal, teils allein, teils zusammen mit Schöffen, in allen Kreisen des Bezirkes vorgestellt bzw. haben über ihre Arbeit Rechenschaft

abgelegt. Trotz der damit verbundenen hohen Belastungen hat, so haben die gemeinsamen Auswertungen gezeigt, diese Arbeit allen große Befriedigung gegeben, denn wir haben das unverminderte Interesse unserer Bürger an den Problemen der Ordnung, Sicherheit und Gesetzlichkeit, ihre kritischen Auffassungen ebenso wie ihre Bereitschaft zur Mitwirkung und Unterstützung deutlicher als jemals zuvor erfahren. Als außerordentlich günstig hat sich die sehr konstruktive Zusammenarbeit mit der Nationalen Front und die Durchführung von Veranstaltungen durch Richter und Schöffen bereits in der Phase der Rechenschaftslegungen erwiesen.

Überall waren wir gefragte Gesprächspartner, und die Darlegung unserer eigenen Probleme wurde allorts mit der aktuellen Auswertung des XI. Parteitages durch unsere Genossen verbunden. Wir können einschätzen, daß unser Beitrag zur Wahl und heute auch bereits darüber hinaus als echte massenpolitische Arbeit zu werten ist.

Parallel zu dieser Arbeit „nach außen“ vollzog sich die Arbeit „nach innen“, nämlich die Auswertung des Parteitages in allen Kollektiven der Bezirksgerichte und Staatlichen Notariate.

Die Grundorganisationen der SED beschlossen dazu Kampfprogramme. Von den staa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Leitungen wurden dazu gemeinsame Maßnahmen festgelegt. Neben der Auswertung der Materialien des Parteitages in größeren Veranstaltungen haben sich dabei besonders Gespräche in kleineren Kollektiven und Gruppen bewährt, die, von Juristen geleitet, gut vorbereitet, ausgehend von den Berichten, Diskussionen und Beschlüssen des Parteitages über vielfältige aktuell-politische Tagesereignisse bis zur Umsetzung in der eigenen Arbeit geführt haben.

Ergänzend dazu fanden im Mai und Juni in Auswertung der Tagung der Direktoren der Bezirksgerichte am 6. Mai 1986 bezirkliche Tagungen der Kreisgerichtsdirektoren und der Leiter der Staatlichen Notariate statt. Die Diskussionen der Genossen und Kollegen zur eigenen Gestaltung gemeinsamer Beschlüsse, ähnlich dem der Gewerkschaftsorganisation der Justizorgane von Eisenach, zeigte, daß sie sich intensiv mit dieser gesamten Problematik auseinandersetzen. Zur Zeit wird in den Kollektiven die Verpflichtungsbewegung weitergeführt. Zahlreiche Kollektiv- und Einzelverpflichtungen liegen dazu vor, und die Gewerkschaftsgruppen der Justizorgane bereiten gemeinsame Beschlüsse vor. In einigen Fällen sind sie auch, wie beispielsweise in Rügen, bereits zum Abschluß gekommen.

Ohne heute bereits eine umfassende Einschätzung vornehmen zu können, wird deutlich:

- Die Erreichung einer besseren Qualität der eigenen Arbeit spielt in den Verpflichtungen eine große Rolle. Das ist um so anerkennenswerter, weil daneben grundsätzlich die Erledigung des Ar-

beitsanfalls fast schon als Selbstverständlichkeit betrachtet wird. Solche Fragestellungen, wie wir sie vor Jahren noch kannten — entweder Qualität oder Quantität — gehören der Vergangenheit an.

Dabei hält die Arbeitsbelastung in fast allen Bereichen unvermindert an. Die Forderung nach Erhöhung der Qualität der eigenen Arbeit bezieht sich dabei in erster Linie auf die Rechtsprechung, aber auch auf die Fragen der Wirksamkeit und Öffentlichkeitsarbeit, was heute bereits als Einheit begriffen wird.

- Die Durchführung von Sprechstunden durch Richter und Notare in abgelegenen Territorien mit größerem Einzugsbereich, neu errichteten Stadtteilen oder Schwerpunktbetrieben nimmt bei den Verpflichtungen einen breiten Raum ein und ist eine Bestätigung dafür, daß der Gedanke, auch in unserer Arbeit die Bürgernähe noch stärker auszuprägen, Platz gegriffen hat.
- Der Mitwirkung bei der Schaffung von Führungsbeispielen bzw. eines Konsultationsstützpunktes in der Stadt Rostock wird ebenfalls große Bedeutung beigemessen. Das Kreisgericht Rostock-Stadt hat dazu bereits konkrete Maßnahmen eingeleitet, um die Schöffen der Betriebe noch stärker in diesen Prozeß einzubeziehen.

Mit dem Beschluß zur Berichterstattung der Kreisleitung Annaberg, dem Beschluß der Gewerkschaftsorganisation der Justizorgane des Kreises Eisenach, den aktuellen zentralen Materialien zur politischen und fachlichen Leitung der Gerichte und Staatlichen Notariate und ganz besonders mit dem heute zu verabschiedenden Dokument, dem ich voll zustimme, ist das notwendige Material in unsere Hand gegeben, unsere vielfältigen Aufgaben im Sinne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cs zu lösen und der von diesem Gremium vorgenommenen hohen Wertschätzung der Arbeit der Justizorgane auch weiterhin gerecht zu werden.

Durch die Wahlen am Bezirksgericht und die damit verbundenen Kaderveränderungen sowohl am Bezirksgericht als auch an den Kreisgerichten ist es gelungen, die Gerichte unseres Bezirkes kadermäßig zu stärken. Wir wissen, daß sich auch künftig nichts im Selbstlauf vollziehen wird, sondern vielmehr um die Durchsetzung der Beschlüsse zäh gerungen werden muß. Aus unseren bisherigen Erfahrungen meinen wir, folgende Gedanken für unsere weitere Arbeit ableiten zu können:

Erstens: Unter Führung der Grundorganisation der Partei muß die enge, inhaltlich abgestimmte Zusammenarbeit der staa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Leitungen weitergeführt werden. Sie muß der Ausprägung einer noch offeneren, kritischeren und produktiveren Arbeitsatmosphäre dienen, die Voraussetzung für eine ständige fachliche und politische Qualifizierung aller Mitarbeiter ist und nicht zuletzt auch Lust an der Arbeit und Stolz auf erreichte Leistungen wecken soll.

Zweitens: Die Leitungstätigkeit aller Ebenen muß u. a. verstärkt darauf ausgerichtet werden, größere Aufmerksamkeit gegenüber Teilbereichen unserer Arbeit walten zu lassen und alle leitenden Mitarbeiter zu befähigen, selbständig und umsichtig ihnen unterstellte Kollektive anzuleiten und zu Höchstleistungen zu führen. Die Rolle und der Einfluß der Direktoren der Kreisgerichte müssen dabei wirksamer werden.

Drittens: Die Führung und Erziehung unserer Kader zu größerer Einsatzbereitschaft und höchsten Leistungen, die Förderung der Umstellungsbereitschaft auf neue Bedingungen unter gleichzeitig richtiger Einordnung der sich stärker ausprägenden persönlichen Interessen und ihrer Befriedigung unter Beachtung des gesamten sozialpolitischen Aspekts muß gedanklich stärker erfaßt und bei der Festlegung von Maßnahmen berücksichtigt werden.

Viertens: Noch größere Aufmerksamkeit in der Leitungstätigkeit müssen wir all den Fragen zuwenden, die mit der weiteren Auspräg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im Zusammenhang stehen. Das beginnt bei der kompromißlosen Durchsetzung zentraler Dokumente, umfaßt die Arbeit mit den Eingaben ebenso wie die mit den Schöffen und gesellschaftlichen Gerichten, aber auch die Wahrung der Gesetzlichkeit in der gesamten gerichtlichen und notariellen Tätigkeit und der Rechte und Pflichten unserer Mitarbeiter.

Fünftens: Aufbauend auf den Erfahrungen der Wahlbewegung halten wir es für erforderlich, die Möglichkeiten, durch unsere Öffentlichkeitsarbeit massenwirksamer zu werden, noch weiter auszuschöpfen. Dabei denken wir nicht in erster Linie an ein Mehr, sondern an die politisch-wirksamere Gestaltung derselben.

Als einen Beweis für die Breite unserer Arbeit kann ich heute noch darüber berichten, daß es in unserem Bezirk gelungen ist, in engstem Zusammenwirken zwischen Direktor und Parteisekretär des Bezirksgerichts und unseren Veteranen eine Chronik der Gerichte im Bezirk Rostock für die Jahre 1945 bis 1963 zu schreiben.

Den Grundstock dazu hat unser Genosse Emil Schmiede, der erste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Rostock, durch seine Lebenserinnerungen geschaffen. Seine Tochter, jetzt auch Veteranin und zuvor Direktor des Kreisgerichts Bad Doberan, hat maßgeblich an der Fertigstellung des ersten Teils von 1945 bis 1952 mitgewirkt. Von der Parteileitung war zwischenzeitlich eine Chronik-Kommission ins Leben gerufen worden. Der erste Teil der Chronik wurde zum 35. Jahrestag der Republik fertiggestellt, der zweite Teil über die Jahre 1952 bis 1963 sollte der Beitrag dieser Kommission zur Vorbereitung des XI. Parteitages sein. Diese Verpflichtung haben die Genossen erfüllt. Ich nehme heute die Gelegenheit, je ein Exemplar dieser Chronik dem Minister der Justiz und dem Präsidenten des Obersten Gerichts zu überreichen.

Diskussionsbeitrag des Direktors des Bezirksgerichts Karl-Marx-Stadt, Dr. Gerhard Hünefeld

Das vorliegende Dokument findet meine volle Zustimmung. Im Mittelpunkt der Überlegungen stehen die Aufgaben, Fragen und Probleme der weiteren Erhöhung der Qualität und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der Rechtsprechung.

So wenig, wie es eine höhere Qualität der Rechtsprechung ohne eine zielgerichtete Leitungstätigkeit gibt, so wenig wird es ein höheres Niveau der Rechtsprechung und der Leitungstätigkeit ohne Erhöhung der Qualität der politischen Führung der Prozesse zur Umsetz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durch die Grundorganisation der SED in den Gerichten geben.

Auf diese Dialektik wurden wir im Bezirk Karl-Marx-Stadt auch durch die Genossen des Sektors Justiz im ZK der SED, die bei uns im März 1986 eine mehrtägige Kontrolle der Verwirklichung des Beschlusses des Sekretariats des ZK der SED zur Berichterstattung der Kreisleitung Annaberg durchführten, mit Nachdruck aufmerksam gemacht.

Zur Sicherung der einheitlichen Durchführ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und der dazu gegebenen zentralen staatlichen Orientierungen konzentriert sich die Parteiorganisation des Bezirksgerichts in ihrer politischen Führungstätigkeit darauf, alle Genossen und Mitarbeiter des Bezirksgerichts politisch-ideologisch zu befähigen, sich auf die neuen und gewachsenen Anforderungen in ihrer staatlichen Tätigkeit einzustellen.

Für die Sicherung des Qualitätszuwachses der Rechtsprechung, aber auch für die noch stärkere Einordnung der gerichtlichen Tätigkeit ins Territorium erscheint uns wichtig, daß jeder Richter und Mitarbeiter

- bei allen zu treffenden Entscheidungen immer von den Gesamtaufgaben, von der Gesamtpolitik des XI. Parteitages ausgeht und jedes einseitige juristische Ressortdenken überwindet;
- noch konkretere Kenntnisse über die sich im Territorium vollziehenden tiefgreifenden ökonomischen Umwälzungen mit allen politischen und sozialen Konsequenzen vermittelt bekommt;
- aus der Generallinie des XI. Parteitages zur Stärkung der sozialistischen Staatsmacht mittels der Weiter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begreift, daß das auch die entscheidende Stoßrichtung des von den Gerichten zu leistenden Beitrages zur Stärkung und zum Schutz der Arbeiter- und Bauern-Macht sein muß.

In der politisch-ideologischen Klärung dieser dialektischen Zusammenhänge haben wir noch manchen Nachholbedarf, müssen wir noch manche Enge im Betrachten und Herangehen überwinden, wenn wir z. B. nur an das Problem der sozialistischen Demokratie denken, das oft aus der Sicht der Gerichte zu isoliert aus dem Blick der Mitwirkung der Werktätigen am

Verfahren oder der Schöffentätigkeit betrachtet wird.

Sozialistische Demokratie ist auch oder vor allem der Ausbau der zielgerichteten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n örtlichen Volksvertretungen, denn diese verwirklichen die sozialistische Demokratie. Sozialistische Demokratie aus der Sicht der Gerichte ist ferner die Förderung der Bewegung für vorbildliche Ordnung, Sicherheit, Disziplin und Gesetzlichkeit in den Betrieben und Wohngebieten; das ist die Zusammenarbeit mit den 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die Leitung der Rechtsprechung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die Mitwirkung gesellschaftlicher Kräfte — angefangen vom Ermittlungsverfahren bis hin zur Hauptverhandlung und zur Auswertung des Verfahrens zur Überwindung von Ursachen und begünstigenden Bedingungen von Rechtsverletzungen; das ist selbstverständlich auch die Arbeit mit den Schöffen.

Im Ergebnis eines schöpferischen Studiums, der Diskussion und Beratung im Parteikollektiv wurde im Juni 1986 ein Kampfprogramm der Grundorganisation der SED beschlossen, welches sich im Verhältnis zu früheren Festlegungen durch eine größere Komplexität, Planmäßigkeit, Langfristigkeit, Konkretheit und Abrechenbarkeit auszeichnet.

Folgende staatliche Aufgaben werden unter straffe Parteikontrolle genommen:

Erstens: Die weitere politisch-fachliche Qualifizierung der Rechtsprechung und ihre Leitung durch das Bezirksgericht, insbesondere

- die Sicherung der konsequenten Verfolgung aller Versuche, die innere Ordnung der DDR durch ideologische Diversion zu beeinträchtigen, und von Straftaten, die provokatorisch die Staatsautorität mißachten und gegen die staatlichen Organe gerichtet sind sowie die Ordnung und Sicherheit bei Sport- und Massenveranstaltungen gefährden;
- die Gestaltung der Vorbeugung und Bekämpfung von Straftaten gegen das sozialistische Eigentum und die Volkswirtschaft sowie Vergeudung und Mißbrauch volkswirtschaftlicher Fonds und schuldhaft verursachte Produktionsstörungen, Brände, Havarien und Arbeitsschutzverletzungen;
- die weitere Qualifizierung der Geldstrafen- und Haftbefehlspraxis;
-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ssicherheit der Bürger und Betriebe durch die ZFA-Rechtsprechung sowie die Nutzung des Arbeitsrechts zum effektiven Einsatz des gesellschaftlichen Arbeitsvermögens und des Zivilrechts für die Durchsetzung der dem sozialistischen Eigentum zustehenden Forderungen;

- die Erhöhung der gesellschaftlichen Wirksamkeit des Verfahrens durch die Anwendung von Gerichtskritik und Hinweis, Verhandlung vor erweiterter Öffentlichkeit, Auswertung des Verfahrens in den Arbeitskollektiven und unter der Jugend;
- die zielgerichtete Mitwirkung der Werktätigen an der Rechtspflege einschließlich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der gesellschaftlichen Gerichte durch die staatlichen Gerichte.

Zweitens: Die Entwicklung schöpferischer Initiativen, Aktivitäten und persönlicher sowie kollektiver Verpflichtungen in Verbindung mit dem Leistungsvergleich zur vorbildlichen Erfüllung aller gerichtlichen Aufgaben mit dem Ziel, eine höhere Qualität in der gesamten staa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Arbeit des Bezirksgerichts und der Kreisgerichte in Umsetzung der Parteibeschlüsse und der verbindlichen Erkenntnisse und Erfahrungen von Annaberg, Eisenach und Fürstenwalde zu erreichen.

Drittens: Die weitere Durchführung des Beschlusses des Sekretariats des ZK über die Arbeit mit den Kadern, insbesondere die Schaffung und Vorbereitung einer einsatzfähigen Kaderreserve für Leitungsfunktionen am Bezirksgericht sowie für Kreisgerichtsdirektoren und die rechtzeitige Sicherung ihrer politisch-fachlichen Qualifizierung.

Viertens: Die Durchführung des Beschlusses des Ministerrates über die marxistisch-leninistische Qualifizierung aller Mitarbeiter der Gerichte.

Fünftens: Die Gestaltung der Informationsbeziehungen des Bezirksgerichts gegenüber der SED-Bezirksleitung, dem Bezirkstag und dem Rat des Bezirkes, dem FDGB-Bezirksvorstand und den Kombinat sowie der Ausbau des Zusammenwirkens zwischen dem Bezirksgericht, der Staatsanwaltschaft und den anderen Sicherheitsorganen.

Sechstens: Das politische Herangehen und die Ergebnisse in der Eingabenbearbeitung.

Mit einem System von Parteaufträgen sowie festgelegten Berichterstattungen und Rechenschaftslegungen des Direktors des Bezirksgerichts, seiner Stellvertreter, der Senatsvorsitzenden, der Leiter der anderen Bereiche einschließlich des Leitenden Sekretärs und des Leiters des Referates Haushalt bis 1988 gehen wir von der Kontinuität der sich aus dem XI. Parteitag ergebenden langfristigen Aufgabenstellungen aus. Mit einem solchen Herangehen wollen wir zugleich besser als in der Vergangenheit die Einheit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und der politisch-ideologischen und fachlichen Erziehung und Befähigung der Kader sichern, wobei wir die höchsten Ansprüche an die Führungskader des Bezirksgerichts selbst, beginnend bei dem Direktor und seinen Stellvertretern sowie den Senatsvorsitzenden stellen und nachdrücklich auf der vollen Wahrnehmung der persönlichen Verantwortung der Führungskader bestehen. Von der kollektiven Fähigkeit dieser Führungskader hängt maßgeblich ab, wie es uns gelingt, zentrale Beschlüsse, Richtlinien, Anordnungen, Weisungen und Orientierungen gemeinsam mit den Direktoren der Kreisgerichte bis zum letzten Richter und Mitar-

beiter durchzusetzen, insbesondere wie es uns gelingt, die Kontrolle der Durchführung, die analytische Tätigkeit und Operativität bei der Leitung der Rechtsprechung weiter zu vervollkommen und noch strenger zu gestalten.

Im vorliegenden Dokument wird die Rolle der Direktoren der Bezirksgerichte und der Direktoren der Kreisgerichte nachdrücklich unterstrichen. Ich betrachte diese Forderung als Herausforderung zur Vervollkommnung und Qualifizierung der eigenen Leitungstätigkeit, die selbstverständlich einen zu erhöhenden Anteil eigener Rechtsprechung als Direktor in sich einschließt. Es ist aber m. E. nicht die wichtigste Frage, wieviel Verfahren ein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selbst verhandelt, sondern noch viel wichtiger erscheint mir, daß er mit Entschlossenheit und Konsequenz die Erkenntnisse des 2. und 10. Plenums des Obersten Gerichts sowie der zentralen Beratung vom 5. September 1984 in seiner Leitungstätigkeit zielstrebig umsetzt und alles tut, die Rolle der zweiten Instanz auf allen Rechtsgebieten weiter auszubauen und zu festigen.

Von größter Bedeutung erscheint mir auch, daß wir in unserer persönlichen Leitungstätigkeit ganz im Sinne der Orientierung des vorliegenden Dokuments in der Tat die volle Konzentration der Kräfte des Bezirksgerichts und aller Kreisgerichte auf die Probleme der Rechtsprechung und ihrer Leitung garantieren. Es geht nicht um die Breite, sondern um die Konzentration der gerichtlichen Kräfte. Wir dürfen nicht nur in Worten die Rechtsprechung als die Haupttätigkeit der Gerichte bezeichnen, sondern müssen durch praktische Leitungsschritte jeglicher Verzettelung der Kräfte des Bezirksgerichts und der Kreisgerichte entgegenzutreten, weil das die Erfüllung des Parteauftrages des XI. Parteitages an die Gerichte schmälert. Die Partei erwartet und fordert zu Recht von uns als Gerichte, daß wir die anfallende Arbeit in hoher Qualität, d. h. mit richtigen Entscheidungen, in den gesetzlichen und zentral vorgegebenen Fristen, und gesellschaftlich wirksam bewältigen. Die Justiz kann für sich keine gesellschaftliche Sonderstellung in Anspruch nehmen. In allen Bereichen ist eine höhere Effektivität und Qualität zu sichern. Wir brauchen deshalb dringend eine klar auf Ergebnisse ausgerichtete konkrete Leitungstätigkeit der Rechtsprechung, konsequente Leistungsförderung und Leistungsfordernungen; wir brauchen bei allen Führungskadern in den Gerichten ein ergebnisbezogenes Denken und Handeln, verbunden mit der Nüchternheit und Realität in der Beurteilung der Lage, der Kräfte und der Arbeitsergebnisse.

Nüchternheit und Realität ist jedoch auch geboten bei der Einschätzung des objektiven Leistungsvermögens der Kreisgerichte. Jeder von uns weiß, daß die Richter an der Basis einem hohen Leistungsdruck ausgesetzt sind. Mathematisch gesehen hat jeder Richter im DDR-Maßstab durchschnittlich für die Bearbeitung eines Verfahrens nur etwa einen Arbeitstag zur Verfügung. Diese außerordentlich hohe Belastung duldet einfach keine Verzettelung der Kräfte.

Die sehr wertvolle Dokumentation des Führungsbeispiels Fürstenwalde veranschaulicht die Dimensionen der Verantwortung eines Kreisgerichtsdirektors, ei-

nes Kreisgerichts. Die Kreisgerichtsdirektoren können nichts weiter delegieren. Hier staut sich an der Basis alles, was es an Leitungsmaßnahmen oder Entscheidungen des übergeordneten Organs gibt.

Für jede durchzuführende Sprechstunde der Gerichte in einem Betrieb, jede gemeinsame Beratung eines Kreisgerichts mit anderen Organen und Betrieben, jede Leiterberatung usw., muß es eine gesellschaftlich dringende und begründete Notwendigkeit geben, muß klar sein, daß sich diese Maßnahmen aus der Zuständigkeit des Kreisgerichts ergeben. Unsere von guten Absichten getragenen Aktivitäten dürfen nicht dazu beitragen, die gesetzlichen Verantwortlichkeiten zu verwischen, sondern müssen sie festigen.

Bei konsequenter Beachtung der Zuständigkeits- und Kompetenzfragen erschließen wir uns als Gerichte nicht unwesentliche Arbeitszeitreserven für die noch bessere Erfüllung unserer gerichtlichen Hauptaufgabe. Wir können zu den Problemen der noch rationelleren effektiveren Arbeit der Gerichte viele gute Überlegungen haben. Im Prinzip geht es nach unseren Erfahrungen dabei um zwei Grundrichtungen:

Einmal um die noch bessere Beherrschung und Anwendung des geltenden materiellen und prozessualen Rechts sowie der zentralen Standpunkte und Leitungsdokumente sowohl durch eine noch effektivere Leitungstätigkeit der Bezirks- und Kreisgerichte als auch durch ein noch höheres Maß in der persönlichen Qualifizierung.

Zum anderen geht es um gesetzgeberische Lösungen, die die Gerichte von bestimmtem Aufwand, der gesellschaftlich nicht objektiv erforderlich ist, befreien.

Mit der Einführung des rechnergestützten Schreibsystems sollte z. B. die Frage geprüft werden, ob § 78 Abs. 3 ZPO nicht eine andere Fassung erhalten könnte, indem die Fälle, wo auf eine schriftliche Begründung des Urteils verzichtet werden kann, erweitert werden.

Wir begrüßen sehr die Position zur Stärkung der richterlichen Eigenverantwortung in Umsetz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Wir würden die Lehren der Beratung in Berlin vom 5. September 1984 vergessen, wenn wir nicht als Direktor des Bezirksgerichts gemeinsam mit unserem Führungskollektiv und den Direktoren der Kreisgerichte unablässig an der Stärkung der Eigenverantwortung arbeiten würden. Diese Stärkung ist ein sehr komplizierter Prozeß und berührt, wie jed., von uns hier weiß, sowohl Fragen des Innenverhältnisses der Gerichte als auch darüber hinausgehende. Wir wissen, daß wir in der Durchsetzung dieses politischen Prinzips die Unterstützung der leitenden Parteorgane haben werden. Darin liegt auch unser großer Optimismus begründet. Die Stärkung der Eigenverantwortung ist nach unseren Erfahrungen im Bezirk mit persönlicher Konsequenz eines jeden Direktors, mit Standfestigkeit im Territorium verbunden. Ihre Einhaltung ist jedoch ein wichtiger Garant für die Wahrung der sozialistischen Gesetzlichkeit im Verfahren und für die Erhöhung der Qualität der Rechtsprechung.

Die Überzeugtheit unserer Partner von der Richtigkeit ihrer Anträge, Auffassungen und Standpunkte ist groß. Ich glaube, hier liegt noch ein großes Feld der gegenseitigen Erziehung zur Achtung, Sachlichkeit und prinzipiellen Gestaltung der Beziehungen in Umsetzung der Beschlüsse des XI. Parteitages vor uns, denn die Stärkung der Eigenverantwortung der Gerichte für ihren Entscheidungsraum bedingt doch objektiv den weiteren Ausbau der kameradschaftlichen Zusammenarbeit der Gerichte mit der Staatsanwaltschaft und mit den anderen Sicherheitsorganen. Gerade in den Leiterberatungen haben wir als Direktoren der Gerichte gute Möglichkeiten zur aktiven Einflußnahme auf die Festigung und Vertiefung des Prozesses der Zusammenarbeit.

Ich darf im Namen des Präsidiums des Bezirksgerichts Karl-Marx-Stadt versichern, daß wir alles in unseren Kräften stehende tun werden, um mit der Kraft aller Gerichte unseres Bezirkes die vom XI. Parteitag der SED gestellten Aufgaben in Ehren und in hoher Qualität zu erfüllen.

Nummer 52

— Auszug / S. 7953 —

Deutscher Bundestag

Stenographischer Bericht

97. Sitzung

Bonn, Mittwoch, den 17. Juni 1992

Beginn: 9.00 Uhr

Präsidentin Dr. Rita Süßmuth: Liebe Kolleginnen und Kollegen, meine Damen und Herren, die Sitzung ist eröffnet.

Ich möchte zunächst eine Erklärung zum Gedenken an den 17. Juni 1953 abgeben.

Ich eröffne die heutige Sitz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mit dem Gedenken an den Volksaufstand in Ost-Berlin und in der DDR am 17. Juni 1953. 39 Jahre sind seit diesem Tag vergangen, an dem die Arbeiter an mehr als 250 Orten zu Hunderttausenden aufstanden und sich in spontanen Demonstrationen gegen die Machthaber in Ostdeutschland erhoben.

Der Aufstand von 1953 hat die ganze Welt aufhorchen lassen. Er war die Erhebung gegen soziale Ungerechtigkeit und Unfreiheit, verbunden mit der Forderung nach freien Wahlen, verbunden mit dem Willen nach Einheit. Es war und bleibt unsere Verpflichtung, Jahr für Jahr daran zu erinnern.

Der 17. Juni war und ist ein Tag der Trauer über die vielen Menschen, die ihre Forderung nach gerechten Arbeits- und Lebensbedingungen, ihr Verlangen nach Freiheit und Demokratie mit dem Leben oder mit langjähriger Haft bezahlt haben. Vom 17. Juni 1953 bis zum Herbst 1989 spannt sich ein Bogen des Freiheitsdranges und des persönlichen Mutes vieler Bürgerinnen und Bürger, die wegen ihres Einsatzes für Freiheit und Demokratie noch lange nach dem 17. Juni 1953, viele sogar ein ganzes Berufsleben lang, Nachteile und persönliche Verfolgung erleiden mußten. Für viele unserer Landsleute im Osten Deutschlands verbindet sich dieser Tag gerade mit der Besorgnis, ihre persönlichen Opfer könnten in Vergessenheit geraten.

Den 17. Juni aus unserer Erinnerung schwinden zu lassen, hieße, die Opfer der kommunistischen Zwangsherrschaft aus unserem Gedächtnis zu tilgen, die lange Reihe derer nämlich, die wegen ihrer Gesinnung und wegen ihres mutigen Eintretens für Recht und Freiheit verfolgt wurden. Sie erwarten von uns zu Recht, daß dieser Einsatz anerkannt und gewürdigt wird.

Der Rechtsausschuß ist übereingekommen, daß im Zusammenhang mit der Verabschiedung des Ersten SED-Unrechtsbereinigungsgesetzes, die für heute mittag vorgesehen ist, eine Ehrenerklärung für die

Opfer der kommunistischen Gewaltherrschaft ausgesprochen werden soll. Die Fraktionen haben mich gebeten, diese Ehrenerklärung für den Deutschen Bundestag abzugeben. Ich bitte Sie, sich zu erheben.

(Die Abgeordneten erheben sich)

Der Deutsche Bundestag würdigt das schwere Schicksal der Opfer und ihrer Angehörigen, denen durch die kommunistische Gewaltherrschaft Unrecht zugefügt wurde.

Den Menschen, die unter der kommunistischen Gewaltherrschaft gelitten haben, ist in vielfältiger Weise Unrecht oder Willkür widerfahren. Sie wurden ihrer Freiheit beraubt und unter menschenunwürdigen Bedingungen inhaftiert. Viele sind in unmenschlichen Haftanstalten umgekommen. Sie wurden gefoltert, gequält und getötet. Sie wurden in ihrem beruflichen Fortkommen behindert, schikaniert und diskriminiert. Sie wurden verschleppt. Sie wurden unter Mißachtung elementarer Grundsätze der Menschlichkeit aus ihrer Heimat, von Haus und Hof und aus ihren Wohnungen vertrieben. Sie wurden an Eigentum und Vermögen geschädigt.

Der Deutsche Bundestag verneigt sich vor allen Opfern kommunistischer Unrechtsmaßnahmen.

Er bezeugt all jenen tiefen Respekt und Dank, die durch ihr persönliches Opfer dazu beigetragen haben, nach über 40 Jahren das geteilte Deutschland in Freiheit wieder zu einen.

Sie haben sich zu Ehren der Opfer erhoben. Ich danke Ihnen.

Ich füge hinzu: Der Aufstand 1953 wurde niedergeschlagen, nicht aber der Freiheitswille in West und Ost. Die Flucht in die Freiheit konnte weder durch Mauer noch durch Stacheldraht beendet werden.

Der Wille zur Freiheit war unbezwingbar und setzte sich 1989 durch. Der Trauer folgte die Freude. Der Unterdrückung und Teilung folgten Freiheit und Einheit; dem 17. Juni folgte der 3. Oktober, der „Tag der Deutschen Einheit“. Beides verpflichtet gegenüber Vergangenheit und Zukunft.

Nummer 53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Nr. 139/S. 1265 Bonn, den 22. Dezember 1992

Bulletin

Besuch des Bundeskanzlers in der Russischen Föderation

vom 14. bis 16. Dezember 1992

Bundeskanzler Dr. Helmut Kohl stattete der Russischen Föderation vom 14. bis 16. Dezember 1992 einen Besuch ab.

— Auszug / S. 1276 —

Gemeinsame Erklärung von Bundeskanzler Dr. Helmut Kohl und Präsident Boris N. Jelzin über die Rehabilitierung unschuldig Verfolgter

Deutschland und Rußland

- eingedenk der unheilvollen Abschnitte ihrer gemeinsamen Geschichte,
- als Ausdruck ihres Bekenntnisses zu Menschenrechten, Demokratie und Rechtsstaatlichkeit,
- in dem Wunsche, mit dieser Erklärung zur Aussöhnung zwischen dem deutschen und dem russischen Volk beizutragen,

stimmen überein:

Den unschuldigen Opfern von Willkür und Unterdrückung muß Gerechtigkeit widerfahren.

Sie anerkennen die Bemühungen, dem einzelnen Betroffenen Rehabilitierung zu verschaffen und sprechen sich für eine beschleunigte Fortführung dieser Bemühungen im Einzelfall aus.

Sie stellen fest, daß die zu Unrecht Verurteilten und unschuldig Verfolgten moralisch rehabilitiert sind.

Wer über diese Erklärung hinausgehend individuelle Rehabilitierung begehrt, kann diese in individuellem Verfahren verfolgen.

Sie sind sich darüber einig, daß Rehabilitierungsentscheidungen nicht als Grundlage für Forderungen dienen können, die zum geltenden Recht und zu den internationalen Verpflichtungen beider Seiten in Widerspruch stehen.

Nummer 54

Rückstände (Stand: 9. März 1993)

Land	Offene Anträge									
	Dezember 1991	Januar 1992	März 1992	Mai 1992	Juni 1992	Juli 1992	August 1992	September 1992	Oktober 1992	Dezember 1992
Berlin ...	34 000	34 000	*)	ca. 10 000	4 612	ca. 4 000	3 450	*)	*)	1 419
Brandenburg	130 000 140 000	167 094	176 801	185 678	191 519	201 164	199 487	205 162	203 524	199 584
Mecklenburg-Vorpommern	105 000	*)	ca. 119 000	119 889	**)	121 553	**)	**)	123 642	129 778
Sachsen ...	131 000	123 677	126 039	128 683	129 404	129 361	129 451	127 724	125 999	119 816
Sachsen-Anhalt ...	86 260	95 943	79 715	80 037	77 779	80 454	87 086	*)	*)	85 690
Thüringen	114 500	113 426	114 348	115 239	116 443	115 418	116 840	114 274	111 389	88 094
Summe ****) (inkl. Berlin) ...	ca. 610 800	ca. 629 000	ca. 649 900	ca. 639 500	ca. 639 600	ca. 652 000	ca. 657 900	ca. 659 200	ca. 655 100	ca. 624 400
(excl. Berlin) ...	ca. 576 800	ca. 595 000	ca. 615 900	ca. 629 500	ca. 635 000	ca. 648 000	ca. 654 400	ca. 655 800	ca. 651 600	ca. 623 000

*) z. Z. keine Angabe möglich; Zahlen liegen den Ländern nicht vor bzw. werden gerade ermittelt

***) eine Mitteilung kann nur am Quartalsende erfolgen

****) durch Einführung der neuen Gerichtsstruktur zum 1. Juli 1992 können z. Z. keine landesweiten Angaben gemacht werden; neue Zahlen werden in Kürze übermittelt

*****) geschätzt, soweit aktuelle Zahlen von den einzelnen Ländern nicht mitgeteilt wurden. In diesen Fällen wurden jeweils die zuletzt mitgeteilten Zahlen zugrunde gelegt.

Nummer 55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Z B 1 — 5106 I — 68 — 4 —

Übersicht über die Kostenerstattung des Bundes im Rahmen der Verwaltungsvereinbarung über die Gewährung von Finanzhilfen des Bundes bei der Einführung der Informationstechnik im Grundbuchwesen der neuen Länder (19. April 1993)

Land	Jahr	Soll gemäß Vereinbarung DM	Mittelabruf		Auszahlung		Ergebnisübersicht				Bemerkungen
			Schreiben vom	Betrag DM	Datum	Betrag DM	Jahressumme DM	Gesamtsumme DM	Noch zur Verfügung DM		
1 Berlin	2		4	5	6	7	8	9	10	11	
	1992	1755000,00	12. November 1992	1080286,98	7. Dezember 1992	1080286,98	1080286,98			noch mögliche Meldung:	
	1993	227500,00	11. Januar 1993	18662,20	7. April 1993	18662,20	18662,20				
	1994	520000,00					0,00	1098949,18	1403550,82	1403550,82	
Brandenburg	1992	3412500,00	13. Juli 1992	990840,09	4. August 1992	990840,09					
			29. September 1992	992273,05	9. Oktober 1992	992273,05					
	1993	1706250,00	8. Dezember 1992	1590166,49	4. Dezember 1992	1590166,49	3573279,63			noch mögliche Meldung:	
Mecklenburg-Vorpommern		5118750,00		3573279,63		3573279,63		3573279,63	1545470,37	1545470,37	
	1992	3331250,00					0,00			noch mögliche Meldung:	
Sachsen		3331250,00		0,00		3331250,00		0,00	3331250,00	3331250,00	
	1992	6467500,00	3. Juli 1992	5225822,00	4. August 1992	5225822,00					
			5. August 1992	2297061,00	2. September 1992	1241678,00					
	1993	1527500,00	17. Dezember 1992	2466259,00	7. April 1993	1235867,00	7522883,00				Mehrermeldung:
Sachsen-Anhalt	1994	763750,00					1235867,00				
		8758750,00		9989142,00		8758750,00		8758750,00	0,00	0,00	—1230392,00
	1992	975000,00	12. Oktober 1992	538767,50	7. Dezember 1992	1012984,50	1012984,50				
	1993	1462500,00	24. November 1992	474217,00			0,00				noch mögliche Meldung:
Thüringen	1994	1462500,00					0,00				
	1995	1300000,00					0,00				
		5200000,00		1012984,50		1012984,50		1012984,50	4187015,50	4187015,50	
	1992	3233750,00	12. Oktober 1992	1448748,64	7. Dezember 1992	3233750,00	3233750,00				noch mögliche Meldung:
Summen	1993	1836250,00	19. November 1992	1785001,36		3233750,00	3233750,00				
		5070000,00		3233750,00		3233750,00		3233750,00	1836250,00	1836250,00	
	1992	—	—	—	—	—	16423184,11	—	—	—	
	1993	—	—	—	—	—	1254529,20	—	—	—	
1994	—	—	—	—	—	0,00	—	—	—		
1995	—	—	—	—	—	0,00	—	—	—		
1992-95	29981250,00		—	—	—	—	17677713,31	12303536,69			

Nummer 56

**Die Einnahm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und der knappschaftlichen Rentenversicherung 1990 bis 1992 in den alten Bundesländern**

Position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liche			Gesetzliche ¹⁾		
	der Arbeiter			der Angestellten			Rentenversicherung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in Mio DM											
Einnahmen												
Beiträge	81646	85111	88119	93230	98217	105191	2592	2486	2478	177508	185814	195788
Zuschüsse und Erstattungen												
Bundeszuschuß ²⁾	24241	26725	31594	5456	6015	7112	10146	10834	11151	39843	43574	49857
Sonstige Erstattungen aus öffentlichen Mitteln ³⁾	3246	3814	425	1831	2108	675	187	204	65	5264	6126	1165
Erstattungen in der Wander- versicherung												
von der KnRV	348	365	383	114	122	134	—	—	—	—	—	—
von der ArV	—	—	—	—	—	—	3192	3396	3527	—	—	—
von der AnV	—	—	—	—	—	—	998	1065	1112	—	—	—
für Aufwendungen zur 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⁴⁾												
von der ArV	—	—	—	—	—	—	84	—	—	—	—	—
von der AnV	—	—	—	—	—	—	16	—	—	—	—	—
Wanderungsausgleich an KnRV nach § 223 (6) SGB VI												
von der ArV	—	—	—	—	—	—	—	—	60	—	—	—
von der AnV	—	—	—	—	—	—	—	—	72	—	—	—
Vermögenserträge	891	1036	1026	1334	2365	3186	5	5	21	2230	3406	4233
Finanzausgleich nach § 218 SGB VI	5308	6043	988	—	—	—	—	—	—	—	—	—
Sonstige Einnahmen	47	49	46	20	21	23	0	0	90	67	70	159
Einnahmen insgesamt	115767	123143	122581	101985	108848	116321	17220	17990	18576	224912	238990	251202

¹⁾ Ohné Zahlungen der Versicherungszweige untereinander.

²⁾ Allgemeiner Bundeszuschuß nach § 213 und 215 SGB VI

³⁾ Erstattungen der Versorgungsdienststellen sowie des Bundes für Kinderzuschüsse und bis 1991 für Leistungen nach dem KLG und HEZG

⁴⁾ Beteiligung an den Kosten der knappschaftlichen Krankenversicherung nach Art. 2 § 26e KnVNG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Nummer 57

**Die Ausgab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und der knappschaftlichen Rentenversicherung 1990 bis 1992 in den alten Bundesländern**

Position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liche			Gesetzliche ¹⁾		
	der Arbeiter			der Angestellten			Rentenversicherung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in Mio DM											
Ausgaben												
Renten ²⁾	98 128	103 647	109 221	77 746	82 760	87 696	14 680	15 457	15 927	190 554	201 864	212 844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an die KnRV	3 192	3 396	3 527	998	1 065	1 112	—	—	—	—	—	—
an die ArV	—	—	—	—	—	—	348	365	383	—	—	—
an die AnV	—	—	—	—	—	—	114	122	134	—	—	—
Maßnahmen zur Erhaltung, Besserung und Wiederher- stellung d. Erwerbsfähigkeit und zusätzliche Leistungen	3 430	3 802	4 218	2 024	2 230	2 448	88	101	119	5 542	6 133	6 785
Knappschaftsausgleichs- leistungen	—	—	—	—	—	—	469	462	476	469	462	476
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6 117	6 277	6 531	4 854	5 021	5 267	1 190	1 124	1 148	12 161	12 422	12 946
KLG-Leistungen	1 832	2 129	2 059	599	761	748	116	127	121	2 547	3 017	2 928
Beteiligung an den Kosten für die knappschaftliche Kran- kenversicherung ³⁾	84	—	—	16	—	—	—	—	—	—	—	—
Beiträgererstattungen	156	182	234	45	47	49	4	5	7	205	234	290
Wanderungsausgleich an KnRV § 223 (6) SGB VI	—	—	60	—	—	72	—	—	—	—	—	—
Verwaltungs- und Verfahrenskosten	2 167	2 363	2 517	1 446	1 576	1 733	208	220	236	3 821	4 159	4 486
Finanzausgleich nach § 218 SGB VI ⁴⁾	—	—	—	5 308	6 043	4 603	—	—	—	—	—	3 615
Sonstige Ausgaben	11	14	36	7	11	7	3	7	25	21	32	68
Ausgaben insgesamt	115 117	121 810	128 403	93 043	99 514	103 735	17 220	17 990	18 576	215 320	228 323	244 438
Einnahmen weniger Ausgaben	650	1 333	-5 822	8 942	9 334	12 586	0	0	0	9 592	10 684	6 764
nachrichtlich:												
Vermögen am Jahresende	19 017	20 350	14 528	33 892	43 226	54 922	477	627	541	53 386	64 203	69 991
darunter:												
Schwankungsreserve ⁵⁾	9 449	10 247	3 959	25 499	32 037	44 485	283	283	67	35 231	42 567	48 511
Verwaltungsvermögen ⁶⁾	3 198	3 285	3 398	1 836	1 911	2 044	77	113	115	5 111	5 309	5 557

¹⁾ ohne Zahlungen der Versicherungszweige untereinander

²⁾ einschl. der zu Lasten ander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ausgezahlten Leistungsanteile

³⁾ Beteiligung an den Kosten der knappschaftlichen Krankenversicherung nach Art. 2 § 26 e KnVNG

⁴⁾ in 1992 einschl. 3 615 Mio. DM Finanzausgleich an die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in den neuen Bundesländern

⁵⁾ Für ArV/AnV Schwankungsreserve nach §§ 216, 217 SGB VI; für KnRV Rücklage nach § 215 SGB VI.

⁶⁾ In der AnV ab 1992 einschl. neue Bundesländer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Nummer 58

Die Einnahm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und der knappschaftlichen Rentenversicherung 1990 bis 1992 in den alten Bundesländern

Position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liche		Gesetzliche ¹⁾	
		der Arbeiter		der Angestellten		Rentenversicherung			
	2. Halbjahr	1991	1992	1991	1992	1991	1992	1991	1992
in Mio. DM									
Einnahmen									
Beiträge	9 155	14 079	14 592	11 519	17 961	1 164	1 194	26 762	33 747
Zuschüsse und Erstattungen									
Bundeszuschuß ²⁾	3 640	3 103	6 318	2 538	1 422	1 261	725	6 902	8 465
Sonstige Erstattungen aus öffentlichen Mitteln ³⁾	750	—	73	—	121	—	11	—	205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von der KnRV	—	—	1	—	0	—	—	—	—
von der ArV	—	—	—	—	—	—	1 272	—	—
von der AnV	—	—	—	—	—	—	1	—	—
Wanderungsausgleich an KnRV nach § 223 (6) SGB VI									
von der ArV	—	—	—	—	—	—	151	—	—
von der AnV	—	—	—	—	—	—	186	—	—
Vermögenserträge ⁴⁾	35	43	198	36	24	5	2	84	224
Finanzausgleich nach § 218 SGB VI 5)	—	—	3 615	—	—	—	—	—	3 615
Sonstige Einnahmen	—	4	41	4	15	0	0	8	56
Einnahmen insgesamt	13 580	17 229	24 838	14 097	19 543	2 430	3 542	33 756	46 312

¹⁾ ohne Zahlungen der Versicherungszweige untereinander

²⁾ allgemeiner Bundeszuschuß nach § 213 und 215 SGB VI; im 2. Halbjahr 1990 einschl. 1 340 Mio. DM Defizitdeckung

³⁾ In 1990: Anschubfinanzierung; in 1992: Erstattungen der Versorgungsdienststellen sowie des Bundes für Kinderzuschüsse

⁴⁾ In 1990 einschl. sonstiger Einnahmen

⁵⁾ vo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Nummer 59

Die Ausgab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und der knappschaftlichen Rentenversicherung 1990 bis 1992 in den neuen Bundesländern

Position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liche		Gesetzliche ¹⁾	
		der Arbeiter		der Angestellten		Rentenversicherung			
	2. Halbjahr	1991	1992	1991	1992	1991	1992	1991	1992
in Mia DM									
Ausgaben									
Renten ⁴⁾	12 293	15 668	21 170	12 819	18 767	2 103	3 240	30 590	43 177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an die KnRV	—	—	1 272	—	1	—	—	—	—
an die ArV	—	—	—	—	—	—	1	—	—
an die AnV	—	—	—	—	—	—	—	—	—
Maßnahmen zur Erhaltung, Besserung und Wiederher- stellung d. Erwerbsfähigkeit und zusätzliche Leistungen	402	121	214	99	185	2	12	222	411
Knappschaftsausgleichs- leistungen	—	—	—	—	—	—	—	—	—
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787	877	1 334	718	1 171	296	238	1 891	2 743
KLG-Leistungen	—	—	—	—	1	—	—	—	1
Beitragererstattungen	—	—	—	—	—	—	—	—	—
Wanderungsausgleich an KnRV § 223 (6) SGB VI	—	—	151	—	186	—	—	—	—
Verwaltungs- und Verfah- renskosten ³⁾	98	265	554	217	354	29	44	511	952
Finanzausgleich nach § 218 SGB VI	—	—	—	—	—	—	—	—	—
Sonstige Ausgaben	—	14	—	12	—	—	7	26	7
Ausgaben insgesamt	13 580	16 945	24 695	13 865	20 665	2 430	3 542	33 240	47 291
Einflüsse weniger Ausgaben	0	284	143	232	-1 122	0	0	516	-979
nachrichtlich:									
Vermögen am Jahresende ²⁾	—	417	560	232	—	17	22	666	582
darunter:									
Schwankungsreserve ⁴⁾ 5)	—	284	612	327	—	7	7	618	619
Verwaltungsvermögen ⁵⁾	—	182	370	26	—	10	14	218	384

1) ohne Zahlungen der Versicherungszweige untereinander

2) einschl. der zu Lasten ander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ausgezahlten Leistungsanteile.

3) Im 2. Halbjahr 1990 einschl. sonstige Ausgaben.

4) Für ArV/AnV Schwankungsreserve nach §§ 216, 217 SGB VI; für KnRV Rücklage nach § 215 SGB VI.

5) Für die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ab 1992 in den Angaben für die alten Bundesländer enthalten.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Nummer 60

Die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der Einnahmen und der Ausgab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in den alten Bundesländern, 1993 bis 1997

	1993	1994	1995	1996	1997
Entwicklung der					
— Entgelte v. H.	2,8	2,2	3,7	3,7	3,7
— Anzahl der Versicherten v. H.	-1,96	-0,85	0,81	0,81	0,81
Anzahl der Arbeitslosen — Tsd. —	2 308	2 608	2 498	2 388	2 270
Beitragssatz v. H.	17,5	19,2	18,9	18,8	18,8
KVdR-Zuschuß v. H.	6,70	6,60	6,60	6,60	6,60
Einnahmen					
Beitragseinnahmen insgesamt	195 400	215 900	231 177	239 990	249 686
Bundeszuschuß	40 619	46 963	47 524	48 313	50 100
Erstattungen aus öffentlichen Mitteln . .	1 090	1 076	1 063	1 050	1 050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von der KnRV	546	568	580	584	594
Vermögenserträge	3 300	1 474	1 248	1 265	1 305
sonstige Einnahmen	65	0	0	0	0
Einnahmen insgesamt	241 020	265 982	281 591	291 202	302 734
Ausgaben					
Rentenausgaben	208 800	221 430	230 838	237 333	245 941
Zuschüsse zur 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13 119	14 288	14 783	15 199	15 751
Beiträge zur Pflegeversicherung	0	1 128	1 176	2 054	2 128
Rehabilitationsmaßnahmen	7 760	7 951	8 246	8 566	8 883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an die KnRV	4 947	5 145	5 249	5 289	5 366
Wanderungsausgleich	233	348	422	497	570
KLG-Leistungen	2 715	2 618	2 473	2 296	2 139
Beitragserrstattungen	300	200	200	200	200
Verwaltungs- und Verfahrenskosten . . .	4 650	4 788	5 002	5 226	5 460
sonstige Ausgaben	25	0	0	0	0
Ausgaben insgesamt	242 549	257 895	268 389	276 661	286 439
Einnahmen — Ausgaben	-1 529	8 087	13 202	14 541	16 295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Nummer 61**Die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der Einnahmen und der Ausgaben in der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3 bis 1997**

— in Mio. DM —

	1993	1994	1995	1996	1997
Entwicklung der					
— Entgelte v. H.	10,0	8,2	8,0	8,0	8,0
— Anzahl der Versicherten v. H.	-4,02	-0,89	-0,04	-0,06	-0,07
Anzahl der Arbeitslosen — Tsd. —	1 170	1 150	1 140	1 120	1 100
Beitragssatz v. H.	17,5	19,2	18,9	18,8	18,8
KVdR-Zuschuß v. H.	6,25	6,40	6,50	6,50	6,50
Einnahmen					
Beitragseinnahmen insgesamt	35 200	39 948	45 589	47 889	50 984
Bundeszuschuß	9 521	11 426	12 003	12 573	13 395
Erstattungen aus öffentlichen Mitteln . .	210	210	210	210	210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von der KnRV	5	5	5	5	7
Vermögenserträge	150	32	37	43	45
sonstige Einnahmen	20	0	0	0	0
Einnahmen insgesamt	45 106	51 622	57 845	60 721	64 641
Ausgaben					
Rentenausgaben	49 576	54 510	58 927	62 359	66 324
Zuschüsse zur Krankenversicherung der Rentner	3 027	3 326	3 801	4 054	4 311
Beiträge zur Pflegeversicherung	0	280	302	544	579
Rehabilitationsmaßnahmen	650	1 743	1 883	2 033	2 196
Erstattungen in der Wanderversicherung an die KnRV	1 536	1 658	1 783	1 885	1 996
Wanderungsausgleich	566	838	1 006	1 191	1 387
KLG-Leistungen	3	3	3	3	3
Beitragserrstattungen	0	0	0	0	0
Verwaltungs- und Verfahrenskosten . . .	1 205	1 313	1 429	1 556	1 692
sonstige Ausgaben	0	0	0	0	0
Ausgaben insgesamt	56 563	63 671	69 135	73 625	78 486
Einnahmen — Ausgaben	-11 457	-12 049	-11 290	-12 904	-13 844

Quelle: Rentenversicherungsbericht 1993

Nummer 62a

1.1 Gesamtdeutsche Ergebnisse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für 1991

Mrd DM

Gegenstand der Nachweisung	Deutschland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Deutschland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In jeweiligen Preisen			in Preisen von 1991		
Entstehung des Inlandsprodukts						
Bruttowertschöpfung (unbereinigt)	2 738,73	2 543,29	193,44	2 738,73	2 643,29	163,44
Land- und Forstwirtschaft, Fischerei	39,30	33,60	2,50	39,30	33,60	2,50
Produzierendes Gewerbe	1 075,09	1 005,84	69,25	1 075,09	1 035,91	69,25
Handel und Verkehr	406,18	378,79	29,40	406,18	378,78	29,40
Dienstleistungsunternehmen	837,14	791,22	45,92	837,14	791,22	45,92
Staat, private Haushalte u. ä.	387,02	333,65	46,37	387,02	335,65	46,37
Bruttowertschöpfung (bereinigt) 1)	2 600,72	2 429,16	171,57	2 600,72	2 429,16	171,57
Bruttoinlandsprodukt 2)	2 816,87	2 635,00	180,87	2 816,87	2 635,00	180,87
+ Einkommen aus der übrigen Welt (Saldo) 3)	27,89	18,70	9,19	27,89	18,70	9,19
= Bruttoezialprodukt	2 843,76	2 653,70	190,06	2 843,76	2 653,70	190,06
Verwendung des Inlandsprodukts						
Privater Verbrauch	1 607,69	1 428,31	179,38	1 607,69	1 428,31	179,38
Staatsverbrauch	552,11	486,83	65,28	552,11	486,83	65,28
Bruttoinvestitionen	658,79	571,50	87,29	658,79	571,50	87,29
Anlageinvestitionen	652,07	564,90	87,17	652,07	554,60	87,17
Ausrüstungen	304,67	262,84	41,83	304,67	262,84	41,83
Bauten	347,40	302,06	45,34	347,40	302,06	45,34
Vorratsveränderung	6,72	6,90	0,12	6,72	6,90	0,12
Letzte inländische Verwendung von Gütern	2 818,59	2 488,34	352,25	2 818,59	2 488,34	352,25
Außenbeitrag (Ausfuhr minus Einfuhr) 4)	-2,72	168,66	-171,38	-2,72	168,69	-171,38
Ausfuhr von Waren und Dienstleistungen 4)	712,26	692,63	46,85	712,26	692,63	46,85
Einfuhr von Waren und Dienstleistungen 4)	714,98	723,87	218,23	714,98	723,87	218,23
Bruttoinlandsprodukt	2 816,87	2 635,00	180,87	2 816,87	2 635,00	180,87
Einkommen						
Bruttovolkseinkommen 5)	2 553,45	2 382,47	190,98	X	X	X
dar. Einkommen aus unselbständiger Arbeit	1 608,78	1 423,01	185,75	X	X	X
Bruttolohn- und -gehaltsumme von Inländern empfangen	1 311,40	1 166,53	155,87	X	X	X
im Inland entstanden	1 309,15	1 163,10	145,06	X	X	X
Verfügbares Einkommen der privaten Haushalte	1 644,31	1 650,47	193,04	X	X	X
dar. empfangene laufende Übertragungen	473,35	401,50	71,85	X	X	X
Espans der privaten Haushalte	236,92	222,19	14,49	X	X	X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Durchschnitt in 1 000		
Bevölkerung (Einwohner)	79 084	64 074	15 910	X	X	X
Erwerbspersonen	39 104	30 682	8 422	X	X	X
- Arbeitslose	2 602	1 689	913	X	X	X
= Erwerbstätige Inländer	36 502	28 993	7 600	X	X	X
Selbständige u.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3 406	3 044	362	X	X	X
beschäftigte Arbeitnehmer	33 096	25 949	7 147	X	X	X
+ Empfänger abzüglich Auspendler	-58	234	-290	X	X	X
= Erwerbstätige im Inland	36 448	26 227	7 219	X	X	X
dar. beschäftigte Arbeitnehmer im Inland	33 040	26 183	6 867	X	X	X
Angaben je Einwohner, je Erwerbstätigen und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DM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35 200	41 100	11 430	35 200	41 100	11 400
je Erwerbstätigen	77 300	90 200	26 100	77 300	90 200	25 100
Bruttoezialprodukt je Einwohner	35 600	41 400	11 900	35 600	41 400	11 000
Bruttolohn- und -gehaltsumme monatlich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Inländer)	3 300	3 710	1 820	X	X	X

1) Summe der Bruttowertschöpfung nach Abzug der unterstellten Entgelte für Bankdienstleistungen.

2) Bereinigte Bruttowertschöpfung zuzüglich nichtabziehbare Umsatzsteuer und Einfuhrabgaben.

3) Aus der übrigen Welt empfangene abzüglich an die übrige Welt geleistete Erwerbs- und Vermögensinkommen.

4) Früheres Bundesgebiet sowie neue Länder und Berlin-Ost einschließlich innerdeutscher Transaktionen.

5) Eincht. Abschreibungen.

Nummer 62b

1.2 Gesamtdesische Ergebnisse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für 1992

Mill. DM

Gegenstand der Nachweisung	Deutschland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Deutschland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In jeweiligen Preisen			In Preisen von 1991		
Entstehung des Inlandsprodukts						
Bruttowertschöpfung (unbereinigt)	2 240,49	2 732,27	244,22	2 764,76	2 584,43	210,33
Land- und Forstwirtschaft, Fischerei	36,56	33,01	3,55	39,34	36,37	2,97
Produzierendes Gewerbe	1 129,59	1 041,68	85,21	1 031,25	1 002,68	79,17
Handel und Verkehr	418,76	386,29	30,47	405,44	376,92	29,52
Dienstleistungsunternehmen	648,04	881,85	86,29	630,14	828,57	53,57
Staat, private Haushalte u. d.	418,24	359,04	59,00	388,81	342,46	46,16
Bruttowertschöpfung (bereinigt) 1)	2 795,87	2 874,96	220,92	2 652,14	2 494,89	187,45
Bruttoinlandsprodukt 2)	3 027,82	2 794,20	233,42	2 874,41	2 678,00	198,41
+ Einkommen aus der übrigen Welt (Saldo) 3)	16,44	4,80	11,84	15,76	4,60	11,28
= Bruttosozialprodukt	3 044,26	2 799,00	245,26	2 890,17	2 682,60	209,67
Verwendung des Inlandsprodukts						
Privater Verbrauch	1 722,07	1 510,03	212,04	1 644,62	1 452,08	192,54
Staatsverbrauch	606,40	500,61	105,79	573,04	491,33	91,71
Bruttoinvestitionen	702,19	688,97	113,22	677,08	669,55	107,53
Anlageinvestitionen	709,22	693,59	115,83	679,45	571,36	108,09
Ausstattungen	304,63	257,39	47,24	298,86	252,56	46,33
Bauten	404,59	336,20	68,39	380,58	318,80	61,78
Vorratsveränderung	-7,03	-4,62	-2,41	-2,37	-1,81	-0,56
Letzte inländische Verwendung von Gütern	3 030,66	2 699,81	431,05	2 894,74	2 502,98	391,76
Außenbeitrag (Ausfuhr minus Einfuhr) 4)	-3,64	194,59	-197,63	-20,33	173,04	-123,37
Ausfuhr von Waren und Dienstleistungen 4)	717,97	934,80	53,46	713,25	925,42	82,91
Einfuhr von Waren und Dienstleistungen 4)	721,01	740,21	261,08	733,58	762,38	246,28
Bruttoinlandsprodukt	3 027,82	2 794,20	233,42	2 874,41	2 676,00	198,41
Einkommen						
Bruttovolkeinkommen 5)	2 717,84	2 481,37	236,27	X	X	X
dar. Einkommen aus unselbständiger Arbeit	1 731,40	1 508,39	223,01	X	X	X
Bruttolohn- und -gehaltssumme von Inländern empfangen im Inland entstanden	1 412,13	1 225,55	186,58	X	X	X
Verfügbares Einkommen der privaten Haushalte der empfangene laufende Übertragungen	1 410,39	1 237,89	172,50	X	X	X
Ersparnis der privaten Haushalte	1 976,51	1 732,27	244,24	X	X	X
	523,86	430,68	92,97	X	X	X
	254,44	222,24	32,20	X	X	X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Durchschnitt in 1 000						
Bevölkerung (Einwohner)	80 595	64 805	15 730	X	X	X
Erwerbspersonen	38 828	30 649	7 879	X	X	X
- Arbeitslose	2 979	1 808	1 170	X	X	X
= Erwerbstätige Inländer	35 850	29 141	6 709	X	X	X
Selbständige u.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3 488	3 055	411	X	X	X
beschäftigte Arbeitnehmer	32 364	26 086	6 298	X	X	X
+ Einpendler abzüglich Auspendler	-19	346	365	X	X	X
= Erwerbstätige im Inland	35 831	29 487	6 344	X	X	X
dar. beschäftigte Arbeitnehmer im Inland	32 365	26 432	5 933	X	X	X
Angaben je Einwohner, je Erwerbstätigen und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DM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37 800	43 100	14 890	35 700	41 300	12 600
je Erwerbstätigen	84 500	64 800	38 800	80 200	90 800	31 300
Bruttosozialprodukt je Einwohner	37 800	43 100	15 600	35 900	41 300	13 300
Bruttolohn- und -gehaltssumme monatlich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Inländer)	3 630	3 020	2 470	X	X	X

1) Summe der Bruttowertschöpfung nach Abzug der unterstellten Entgelte für Bankdienstleistungen.

2) Bereinigte Bruttowertschöpfung zuzüglich nichtversteuertes Umsatzsteuer und Einfuhrabgaben.

3) Aus der übrigen Welt empfangene abzüglich an die übrige Welt geleistete Erwerbs- und Vermögensinkommen.

4) Früheres Bundesgebiet sowie neue Länder und Berlin-Ost einschließlich innerdeutscher Transaktionen.

5) Einschl. Abschreibungen.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Fachserie 18, Reihe 3. 2.V. 1993

Nummer 62c

1.3 Gesamtdeutsche Ergebnisse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für 1987

Veränderung gegenüber dem Vorjahr in %

Gegenstand der Nachweisung	Deutschland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Deutschland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In jeweiligen Preisen			In Preisen von 1991		
Entstehung des Inlandsprodukts						
Bruttowertschöpfung (unbereinigt)	7,7	6,3	26,9	2,1	1,6	8,8
Land- und Forstwirtschaft, Fischerei	0,7	-2,3	X	8,4	7,6	X
Produzierendes Gewerbe	4,9	3,6	23,0	0,6	-0,4	14,3
Handel und Verkehr	2,6	2,5	3,9	-0,2	0,0	-3,0
Dienstleistungsunternehmen	13,2	11,4	44,8	5,1	4,5	16,7
Staat, private Haushalte u. ä.	9,5	7,1	26,4	1,7	2,0	-0,5
Bruttowertschöpfung (bereinigt) 1)	7,6	6,0	28,8	2,0	1,5	6,3
Bruttoinlandsprodukt 2)	7,5	6,0	29,1	2,1	1,6	9,7
+ Einkommen aus der übrigen Welt (Saldo) 3)	X	X	X	X	X	X
= Bruttosozialprodukt	7,0	5,5	29,0	1,6	1,0	10,3
Verwendung des Inlandsprodukts						
Privater Verbrauch	7,1	5,7	18,2	2,3	1,7	7,3
Staatsverbrauch	8,8	7,3	23,6	3,8	3,2	7,2
Bruttoinvestitionen	6,6	3,1	23,7	2,8	-0,3	23,2
Anlageinvestitionen	8,8	5,1	32,6	4,2	1,1	24,0
Ausrüstungen	-0,0	-2,1	12,9	-1,0	-3,9	10,8
Bauten	18,5	11,3	60,8	9,5	6,5	38,2
Vorratsveränderung	X	X	X	X	X	X
Letzte inländische Verwendung von Gütern	7,6	6,4	22,4	2,7	1,6	11,2
Außenbeitrag (Ausfuhr minus Einfuhr) 4)	X	X	X	X	X	X
Ausfuhr von Waren und Dienstleistungen 4)	0,8	4,7	14,1	0,1	3,7	12,9
Einfuhr von Waren und Dienstleistungen 4)	0,8	2,3	15,1	2,6	3,0	12,9
Bruttoinlandsprodukt	7,5	6,0	29,1	2,1	1,6	9,7
Einkommen						
Bruttovolkeinkommen 5)	6,4	6,0	23,7	X	X	X
dar. Einkommen aus unselbständiger Arbeit	7,8	6,9	20,1	X	X	X
Bruttolohn- und -gehaltssumme von Inländern empfangen im Inland entstanden	7,7	6,1	19,7	X	X	X
Verfügbares Einkommen der privaten Haushalte dar. empfangene laufende Übertragungen	7,8	6,4	18,9	X	X	X
Empfänger der privaten Haushalte	7,2	6,0	26,0	X	X	X
Empfänger der privaten Haushalte	10,6	7,3	28,4	X	X	X
Empfänger der privaten Haushalte	7,5	0,0	122,7	X	X	X
Bevölkerung und Erwerbstätigkeit						
Bevölkerung (Einwohner)	0,8	1,2	-1,1	X	X	X
Erwerbspersonen	-0,7	0,9	-6,4	X	X	X
Arbeitslose	14,5	7,0	28,2	X	X	X
Erwerbstätige inländischer	-1,8	0,6	-10,7	X	X	X
Selbständige u.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beschäftigte Arbeitnehmer	1,8	0,4	13,5	X	X	X
+ Einpendler abzüglich Auspendler	-2,2	0,5	-11,9	X	X	X
= Erwerbstätige im Inland	X	X	X	X	X	X
dar. beschäftigte Arbeitnehmer im Inland	-1,7	0,9	-12,1	X	X	X
dar. beschäftigte Arbeitnehmer im Inland	-2,0	1,0	-13,5	X	X	X
Angaben je Einwohner, je Erwerbstätigen und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6,7	4,7	30,5	1,3	0,3	11,0
je Erwerbstätigen	9,4	5,1	46,9	3,8	0,7	24,8
Bruttoinlandsprodukt je Einwohner	6,7	4,2	30,5	0,9	-0,2	11,6
Bruttolohn- und -gehaltssumme mündelich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Inländer)	10,0	8,8	35,8	X	X	X

1) Summe der Bruttowertschöpfung nach Abzug der unterstellten Entgelte für Bankdienstleistungen.

2) Bereinigte Bruttowertschöpfung zuzüglich nichtabziehbare Umsatzaufwand und Einfuhrabgaben.

3) Aus der übrigen Welt empfangene abzüglich an die übrige Welt geleistete Erwerbs- und Vermögens Einkommen.

4) Früheres Bundesgebiet sowie neue Länder und Berlin-Ost einschließlich innerdeutscher Transaktionen.

5) Einschl. Abschreibungen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Fachserie 11, Reihe 3.2 Vj 1993

Nummer 63

2 Erwerbstätigkeit
2.1 Erwerbstätige *)
2.1.1 Erwerbstätige am Wohnort bzw. Arbeitsort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1)
	1 000 Person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Erwerbstätige Inländer (am Wohnort)

1989	9 745	27 761	37 506	X	1,4	X	26,0
1990	8 899	28 486	37 385	-8,7	2,6	-0,3	23,8
1991	7 509	28 993	36 502	-15,6	1,8	-2,4	20,6
1992	6 709	29 141	35 850	-10,7	0,5	-1,8	18,7
1989 1. Hj.	9 842	27 553	37 395	X	1,4	X	26,3
2. Hj.	9 648	27 969	37 617	X	1,5	X	25,6
1990 1. Hj.	9 339	28 246	37 585	-5,1	2,5	0,5	24,8
2. Hj.	8 459	28 726	37 185	-12,3	2,7	-1,1	22,7
1991 1. Hj.	7 806	28 817	36 623	-16,4	2,0	-2,6	21,3
2. Hj.	7 212	29 169	36 381	-14,7	1,5	-2,2	19,8
1992 1. Hj.	6 755	29 085	35 840	-13,5	0,9	-2,1	18,8
2. Hj.	6 663	29 197	35 860	-7,6	0,1	-1,4	18,6
1990 4. Vj.	8 233	28 841	37 074	-15,6	2,7	-2,0	22,2
1991 1. Vj.	7 969	28 709	36 678	-16,8	2,2	-2,6	21,7
2. Vj.	7 643	28 925	36 568	-16,6	1,8	-2,7	20,9
3. Vj.	7 304	29 070	36 374	-16,7	1,6	-2,7	20,1
4. Vj.	7 120	29 268	36 388	-13,5	1,5	-1,9	19,6
1992 1. Vj.	6 791	29 049	35 840	-14,8	1,2	-2,3	18,9
2. Vj.	6 719	29 121	35 840	-12,1	0,7	-2,0	18,7
3. Vj.	6 682	29 206	35 888	-8,5	0,5	-1,3	18,6
4. Vj.	6 644	29 188	35 832	-6,7	-0,3	-1,5	18,5

Erwerbstätige im Inland (am Arbeitsort)

1989	9 747	27 658	37 405	X	1,5	X	26,1
1990	8 820	28 479	37 299	-9,5	3,0	-0,3	23,6
1991	7 219	29 227	36 446	-18,2	2,6	-2,3	19,8
1992	6 344	29 487	35 831	-12,1	0,9	-1,7	17,7
1989 1. Hj.	9 844	27 446	37 290	X	1,4	X	26,4
2. Hj.	9 650	27 870	37 520	X	1,5	X	25,7
1990 1. Hj.	9 317	28 173	37 490	-5,1	2,6	0,5	24,9
2. Hj.	8 323	28 785	37 108	-13,8	3,3	-1,1	22,4
1991 1. Hj.	7 558	29 002	36 560	-18,9	2,9	-2,5	20,7
2. Hj.	6 880	29 452	36 332	-17,3	2,3	-2,1	18,9
1992 1. Hj.	6 393	29 424	35 817	-15,4	1,5	-2,0	17,8
2. Hj.	6 295	29 550	35 845	-8,5	0,3	-1,3	17,6
1990 4. Vj.	8 061	28 941	37 002	-17,4	3,5	-1,9	21,8
1991 1. Vj.	7 747	28 855	36 602	-19,0	3,1	-2,6	21,2
2. Vj.	7 369	29 140	36 518	-19,3	2,8	-2,6	20,3
3. Vj.	6 993	29 334	36 327	-19,4	2,4	-2,6	19,3
4. Vj.	6 767	29 570	36 337	-16,1	2,2	-1,8	18,6
1992 1. Vj.	6 432	29 365	35 797	-17,0	1,8	-2,2	18,0
2. Vj.	6 354	29 483	35 837	-13,8	1,1	-1,9	17,7
3. Vj.	6 314	29 566	35 880	-9,7	0,8	-1,2	17,6
4. Vj.	6 276	29 534	35 810	-7,3	-0,1	-1,5	17,5

*) Durchschnittszahlen aus den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1) A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64

2 Erwerbstätigkeit
2.1 Erwerbstätige *)

2.1.2 Beschäftigte Arbeitnehmer und Selbständige am Wohnort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1)
	1 000 Person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Beschäftigte Arbeitnehmer (Inländer)

1989		9 558	24 750	34 308	X	1,6	X	27,9
1990		8 647	25 460	34 107	-9,5	2,9	-0,6	25,4
1991		7 147	25 949	33 096	-17,3	1,9	-3,0	21,6
1992		6 298	26 086	32 384	-11,9	0,5	-2,2	19,4
1989	1. Hj.	9 657	24 547	34 204	X	1,6	X	28,2
	2. Hj.	5 450	24 953	30 412	X	1,6	X	18,0
1990	1. Hj.	9 123	25 229	34 352	-5,5	2,8	0,4	26,6
	2. Hj.	8 171	25 691	33 862	-9,7	3,0	11,3	24,1
1991	1. Hj.	7 458	25 779	33 237	-18,3	2,2	-3,2	22,4
	2. Hj.	6 836	26 119	32 955	-16,3	1,7	-2,7	20,7
1992	1. Hj.	6 356	26 035	32 391	-14,8	1,0	-2,5	19,6
	2. Hj.	6 240	26 137	32 377	-8,7	0,1	-1,8	19,3
1990	4. Vj.	7 929	25 803	33 732	-17,1	3,0	-2,6	33,5
1991	1. Vj.	7 633	25 675	33 308	-18,6	2,4	-3,3	22,9
	2. Vj.	7 283	25 883	33 166	-17,9	1,9	-3,2	22,0
	3. Vj.	6 933	26 023	32 956	-17,6	1,7	-3,1	21,0
	4. Vj.	6 739	26 215	32 954	-15,0	1,6	-2,3	20,4
1992	1. Vj.	6 399	26 002	32 401	-16,2	1,3	-2,7	19,7
	2. Vj.	6 313	26 068	32 381	-13,3	0,7	-2,4	19,5
	3. Vj.	6 265	26 149	32 414	-9,6	0,5	-1,6	19,3
	4. Vj.	6 215	26 125	32 340	-7,8	-0,3	-1,9	19,2

Selbständige (und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1989		187	3 011	3 198	X	0,3	X	5,8
1990		252	3 026	3 278	34,8	0,5	2,5	7,7
1991		362	3 044	3 406	43,7	0,6	3,9	10,6
1992		411	3 055	3 466	13,5	0,4	1,8	11,9
1989	1. Hj.	185	3 006	3 191	X	0,4	X	5,8
	2. Hj.	189	3 016	3 205	X	0,3	X	5,9
1990	1. Hj.	216	3 017	3 233	16,8	0,4	1,3	6,7
	2. Hj.	288	3 035	3 323	52,4	0,6	3,7	8,7
1991	1. Hj.	348	3 038	3 386	61,1	0,7	4,7	10,3
	2. Hj.	376	3 050	3 426	30,6	0,5	3,1	11,0
1992	1. Hj.	399	3 050	3 449	14,7	0,4	1,9	11,6
	2. Hj.	423	3 060	3 483	12,5	0,3	1,7	12,1
1990	4. Vj.	304	3 038	3 342	65,2	0,6	4,3	9,1
1991	1. Vj.	336	3 034	3 370	62,3	0,7	4,7	10,0
	2. Vj.	360	3 042	3 402	24,6	0,7	2,8	10,6
	3. Vj.	371	3 047	3 418	3,1	0,6	0,9	10,9
	4. Vj.	381	3 053	3 434	25,3	0,5	2,8	11,1
1992	1. Vj.	392	3 047	3 439	16,7	0,4	2,0	11,4
	2. Vj.	406	3 053	3 459	12,8	0,4	1,7	11,7
	3. Vj.	417	3 057	3 474	12,4	0,3	1,6	12,0
	4. Vj.	429	3 063	3 492	12,6	0,3	1,7	12,3

*) Durchschnittszahlen aus den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1) A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65

2 Erwerbstätigkeit
2.1 Erwerbstätige
2.1.3 Neue Länder und Berlin-Ost nach Wirtschaftszweigen und Ländern *)
1 000 Personen
Jahresdurchschnitt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In Inland insgesamt (am Arbeitsort)							
1989	9 860
1990	8 868,0	1 394,7	1 072,7	2 625,3	1 588,6	1 424,5	762,1
1991	7 179,6	1 184,5	829,5	2 086,5	1 305,1	1 139,1	634,9
1992	6 341,0
Land- und Forstwirtschaft, Fischerei							
1989	987
1990	783,6	168,8	175,7	158,6	159,0	115,3	6,2
1991	401,1	90,8	82,9	80,5	79,6	63,7	3,5
1992	300,4
Produzierendes Gewerbe							
1989	4 436
1990	3 988,2	579,3	324,5	1 369,3	742,8	729,4	242,9
1991	2 998,2	461,1	240,4	980,1	587,5	544,8	184,2
1992	2 275,7
Handel und Verkehr							
1989	1 530
1990	1 413,0	219,9	198,2	377,4	255,1	198,4	164,0
1991	1 303,1	225,1	182,1	335,1	240,0	164,5	156,3
1992	1 166,9
Dienstleistungsunternehmen							
1989	624
1990	663,4	98,7	78,1	198,5	96,6	87,3	104,2
1991	812,7	115,1	94,7	241,1	120,8	131,5	109,4
1992	1 017,8
Staat, private Haushalte, Organisationen ohne Erwerbszweck							
1989	2 283
1990	2 019,7	328,0	296,2	521,5	335,1	294,0	244,9
1991	1 664,5	292,4	229,4	449,6	277,2	234,6	181,4
1992	1 580,2

*) Vorläufige Berechnungen der Unterarbeitsgruppe "Neue Länder" der Arbeitsgruppe "Schätzungen der Erwerbstätigkeit". Abweichungen zu den Eokwerten der Tabellen 2.1.1 und 2.1.2 sind dadurch begründet, daß dort bereits revidierte Angaben veröffentlicht sind. Das Ergebnis der Revision in der Untergliederung nach Bundesländern und Wirtschaftsbereichen stand bei Redaktionsschluß noch aus.

Nummer 66

2 Erwerbstätigkeit
2.2 Beitragspflichtige nach dem Arbeitsförderungsgesetz am Monatsanfang *)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Vorjahreszeitraum	
Prozent						
Insgesamt						
1992 D	5 899 012	23 097 452	.	X	.	1,3
1991 2. Hj. D	6 345 349	23 092 361	.	2,5	.	3,4
1992 1. Hj. D	5 901 328	23 010 432	-7,0	-0,4	.	2,1
2. Hj. D	5 830 872	23 164 184	-1,2	0,7	-8,1	0,3
1991 3. Vj. D	6 435 375	23 030 843	.	1,8	.	3,5
4. Vj. D	6 255 324	23 153 878	-2,8	0,5	.	2,9
1992 1. Vj. D	5 840 744	22 960 137	-6,6	-0,8	.	2,3
2. Vj. D	5 961 911	23 060 728	2,1	0,4	.	2,0
3. Vj. D	5 878 607	23 208 713	-1,4	0,6	-8,7	0,8
4. Vj. D	5 783 136	23 119 655	-1,6	-0,4	-7,5	-0,1
1993 1. Vj. D	5 600 832	22 698 638	-3,2	-1,8	-4,1	-1,1
1991 Jun	6 673 815	22 798 085	.	0,7	.	3,6
Jul	6 534 634	22 797 949	-2,1	-0,0	.	3,7
Aug	6 445 661	22 955 765	-1,4	0,7	.	3,4
Sep	6 406 138	23 135 850	-0,6	0,8	.	3,2
Okt	6 374 016	23 203 880	-0,5	0,3	.	3,0
Nov	6 327 475	23 206 586	-0,7	0,0	.	2,8
Dez	6 280 164	23 181 455	-0,7	-0,1	.	2,5
1992 Jan	5 942 650	22 943 308	-5,4	-1,0	.	2,5
Feb	5 851 777	22 929 127	-1,5	-0,1	.	2,3
Mrz	5 806 058	22 967 993	-0,8	0,2	.	2,0
Apr	5 786 146	23 023 273	-0,3	0,2	.	2,1
Mai	6 025 597	23 021 530	4,1	-0,0	.	1,6
Jun	6 007 432	23 121 778	-0,3	0,4	-10,0	1,4
Jul	5 919 264	23 054 478	-1,5	-0,3	-9,4	1,1
Aug	5 877 995	23 134 578	-0,7	0,3	-8,8	0,8
Sep	5 873 327	23 322 094	-0,1	0,8	-8,3	0,8
Okt	5 849 735	23 284 457	-0,4	-0,2	-8,2	0,3
Nov	5 813 942	23 220 649	-0,6	-0,3	-8,1	0,1
Dez	5 788 273	23 110 860	-0,4	-0,5	-7,8	-0,3
1993 Jan	5 644 652	22 770 454	-2,5	-1,5	-5,0	-0,8
Feb	5 611 990	22 715 587	-0,6	-0,2	-4,1	-0,9
Mrz	5 584 486	22 672 778	-0,5	-0,2	-3,8	-1,3
Apr	5 567 388	22 644 643	-0,3	-0,1	-3,8	-1,6
Mai	5 560 647	22 642 264	-0,1	-0,0	-7,7	-1,6
Jun	5 593 177	22 683 619	0,6	0,2	-6,9	-1,9

*) Durchschnittszahlen: Berechnung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Quelle: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Nummer 67

2 Erwerbstätigkeit 2.3 Arbeitsmarkt 2.3.1 Arbeitslose und Arbeitslosenquote am Monatsende 2.3.1.1 Insgesamt

Zeitraum	Arbeitslose						Arbeitslosenquote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2)	Früheres Bundesgebiet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89 D	-	2 037 781	 		X	-9,1	X	7,9	
1990 D	240 611 a)	1 883 147	 		X	-7,6	.	7,2	
1991 D	912 838	1 689 365	 		279,4	-10,3	10,3	6,3	
1992 D	1 170 261	1 808 310	 		28,2	7,0	14,8	6,6	
1990	Okt	536 800	1 687 434	20,7	-2,3	X	-9,9	6,1	6,5
	Nov	589 178	1 685 124	9,8	-0,1	X	-13,6	6,7	6,4
	Dez	642 182	1 784 150	9,0	5,9	X	-13,1	7,3	6,8
1991	Jan	757 162	1 873 989	17,9	5,0	X	-14,5	8,6	7,0
	Feb	786 992	1 868 855	3,9	-0,3	X	-13,2	8,9	7,0
	Mrz	808 349	1 730 959	2,7	-7,4	X	-14,0	9,2	6,5
	Apr	836 940	1 651 946	3,5	-4,6	X	-13,7	9,5	6,2
	Mai	842 285	1 603 676	0,6	-2,9	788,4	-12,0	9,5	6,0
	Jun	842 504	1 592 611	0,0	-0,7	492,9	-11,9	9,5	5,9
	Jul	1 068 639	1 693 685	26,8	6,3	292,9	-9,1	12,1	6,3
	Aug	1 063 237	1 672 218	-0,5	-1,3	194,3	-7,8	12,1	6,2
	Sep	1 028 751	1 609 520	-3,2	-3,7	131,3	-6,8	11,7	6,0
	Okt	1 048 527	1 598 959	1,9	-0,7	95,3	-5,2	11,9	6,0
	Nov	1 030 719	1 618 280	-1,7	1,2	74,9	-4,0	11,7	6,0
	Dez	1 037 709	1 731 218	0,7	7,0	61,6	-3,0	11,8	6,5
1992	Jan	1 343 449	1 875 077	29,5	8,3	77,4	0,1	17,0 (18,5)	6,9
	Feb	1 290 375	1 863 436	-4,0	-0,6	64,0	-0,3	16,4 (17,8)	6,8
	Mrz	1 220 138	1 767 856	-5,4	-5,1	50,9	2,1	15,5 (16,8)	6,5
	Apr	1 195 962	1 747 105	-2,0	-1,2	42,9	5,8	15,2 (16,5)	6,4
	Mai	1 149 140	1 704 442	-3,9	-2,4	36,4	6,3	14,6 (15,8)	6,2
	Jun	1 123 202	1 715 495	-2,3	0,6	33,3	7,7	14,2 (15,5)	6,3
	Jul	1 188 234	1 827 712	5,8	6,5	11,2	7,9	15,1 (16,3)	6,7
	Aug	1 168 732	1 821 634	-1,6	-0,3	9,9	8,9	14,8 (16,1)	6,7
	Sep	1 110 751	1 783 623	-5,0	-2,1	8,0	10,8	14,1	6,5
	Okt	1 097 452	1 830 364	-1,2	2,6	4,7	14,5	13,9	6,7
	Nov	1 086 464	1 884 629	-1,0	3,0	5,4	16,5	13,8	6,9
	Dez	1 100 749	2 025 468	1,3	7,5	6,1	17,0	13,9	7,4
1993	Jan	1 194 365	2 257 028	8,5	11,4	-11,1	20,4	16,4	8,1
	Feb	1 180 680	2 287 941	-1,1	1,4	-8,5	22,8	16,2	8,3
	Mrz	1 140 559	2 223 386	-3,4	-2,8	-6,5	25,8	15,7	8,0
	Apr	1 117 883	2 196 743	-2,0	-1,2	-6,5	25,7	15,4	7,9
	Mai	1 096 580	2 147 936	-1,9	-2,2	-4,6	26,0	15,1	7,8
	Jun	1 099 696	2 166 206	0,3	0,9	-2,1	26,3	15,1	7,8
	Jul	1 166 520	2 325 547	6,1	7,4	-1,8	27,2	16,0	8,4
	Aug	1 174 721	2 314 927	0,7	-0,5	0,5	27,1	16,2	8,4

1) Arbeitslose je 100 abhängige zivile Erwerbspersonen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 geringfügig Beschäftigte, Beamte, Arbeitslose).

2) Der Arbeitslosenquote liegen bis Dezember 1992 die arbeitsortbezogenen Ergebnisse der Berufstätigenerhebungen, für 1993 die wohnortbezogenen Ergebnisse der Beschäftigterhebung vom 30.6.92 zugrunde. Die für Vergleichszwecke umgerechneten Quoten sind in Klammern gesetzt.

a) Berechnung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Nummer 68

2 Erwerbstätigkeit 2.3 Arbeitsmarkt 2.3.1 Arbeitslose und Arbeitslosenquote am Monatsende 2.3.1.2 Frauen

Zeitraum	Arbeitslose						Arbeitslosenquote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2)	Früheres Bundesgebiet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89 D	-	967 978	X		X	-7,2	X	9,4	
1990 D	127 071 a)	915 404	X		X	-5,4	-	8,4	
1991 D	529 961	791 688	X		317,1	-13,5	12,3	7,0	
1992 D	741 145	825 531	X		39,8	4,3	19,6	7,2	
1990	Okt	291 081	836 145	18,9	-2,5	X	-10,6	6,8	7,7
	Nov	321 518	826 056	10,5	-1,2	X	-14,3	7,5	7,6
	Dez	351 779	838 336	9,4	1,5	X	-14,8	8,2	7,7
1991	Jan	414 950	852 808	18,0	1,7	X	-15,8	9,6	7,6
	Feb	430 446	827 887	3,7	-2,9	X	-16,9	10,0	7,4
	Mrz	446 523	792 701	3,7	-4,3	X	-17,4	10,4	7,0
	Apr	469 129	780 931	5,1	-1,5	X	-16,7	10,9	6,9
	Mai	476 819	761 543	1,6	-2,5	X	-15,9	11,1	6,8
	Jun	482 392	757 665	1,2	-0,5	597,1	-16,0	11,2	6,7
	Jul	625 493	809 055	29,7	6,8	343,3	-13,3	14,5	7,2
	Aug	630 545	802 186	0,8	-0,8	228,0	-11,7	14,6	7,1
	Sep	617 492	770 960	-2,1	-3,9	152,2	-10,1	14,3	6,9
	Okt	641 366	765 104	3,9	-0,8	120,3	-8,5	14,9	6,8
	Nov	631 132	766 410	-1,6	0,2	96,2	-7,2	14,6	6,8
	Dez	634 710	787 672	0,6	2,8	80,4	-6,0	14,7	7,0
1992	Jan	827 783	824 490	30,4	4,7	99,5	-3,3	21,8 (23,6)	7,2
	Feb	795 703	813 192	-3,9	-1,4	84,9	-1,8	21,0 (22,7)	7,1
	Mrz	760 599	793 342	-4,4	-2,4	70,3	0,1	20,1 (21,7)	6,9
	Apr	752 553	801 546	-1,1	1,0	60,4	2,6	19,9 (21,5)	7,0
	Mai	726 070	785 983	-3,5	-1,9	52,3	3,2	19,2 (20,7)	6,8
	Jun	714 874	794 114	-1,5	1,0	48,2	4,8	18,9 (20,4)	6,9
	Jul	759 949	853 010	6,3	7,4	21,5	5,4	20,1 (21,7)	7,4
	Aug	753 223	851 977	-0,9	-0,1	19,5	6,2	19,9 (21,5)	7,4
	Sep	718 749	830 907	-4,6	-2,5	16,4	7,8	19,0	7,2
	Okt	712 525	850 140	-0,9	2,3	11,1	11,1	18,8	7,4
	Nov	702 596	865 708	-1,4	1,8	11,3	13,0	18,5	7,5
	Dez	703 513	896 263	0,1	3,5	10,8	13,8	18,6	7,8
1993	Jan	743 042	960 957	5,6	7,2	-10,2	16,6	21,2	8,2
	Feb	729 880	962 367	-1,8	0,1	-8,3	18,3	20,8	8,2
	Mrz	707 545	949 949	-3,1	-1,3	-7,0	19,7	20,2	8,1
	Apr	705 956	963 814	-0,2	1,5	-6,2	20,2	20,2	8,2
	Mai	700 066	949 689	-0,8	-1,5	-3,6	20,8	20,0	8,1
	Jun	707 955	961 728	1,1	1,3	-1,0	21,1	20,2	8,2
	Jul	751 684	1 036 214	6,2	7,7	-1,1	21,5	21,5	8,8
	Aug	760 669	1 032 434	1,2	-0,4	1,0	21,2	21,7	8,8

1) Arbeitslose je 100 abhängige zivile Erwerbspersonen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 geringfügig Beschäftigte, Beamte, Arbeitslose).

2) Der Arbeitslosenquote liegen bis Dezember 1992 die arbeitsortbezogenen Ergebnisse der Berufstätigenerhebungen, für 1993 die wohnortbezogenen Ergebnisse der Beschäftigterhebung vom 30.6.92 zugrunde. Die für Vergleichszwecke umgerechneten Quoten sind in Klammern gesetzt.

a) Berechnung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Nummer 69

2 Erwerbstätigkeit
2.3 Arbeitsmarkt
2.3.2 Arbeitsmarktpolitische Maßnahmen

Zeitraum	Neue	Früheres	Neue	Früheres	Neue	Früheres	Neue	Früheres
	Länder und	Bundes-	Länder und	Bundes-	Länder und	Bundes-	Länder und	Bundes-
	Berlin-Ost	gebiet	Berlin-Ost	gebiet	Berlin-Ost	gebiet	Berlin-Ost	gebiet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				Vormonat		
		Prozent				Prozent		

Kurzarbeiter (Monatsmitte)

Beschäftigte in ABM 1) am Monatsende

1990	Okt	1 703 782	39 404	-1,4	22,2	8 417	84 261	97,2	-1,2
	Nov	1 709 899	48 866	0,4	24,0	14 545	83 332	72,8	-1,1
	Dez	1 794 032	50 471	4,9	3,3	20 316	80 164	39,7	-3,8
1991	Jan	1 840 639	92 646	2,6	83,6	34 409	76 959	69,4	-4,0
	Feb	1 947 059	131 014	5,8	41,4	46 967	77 399	36,5	0,6
	Mrz	1 989 815	139 020	2,2	6,1	62 549	79 533	33,2	2,8
	Apr	2 018 907	145 077	1,5	4,4	84 882	83 355	35,7	4,8
	Mai	1 968 477	111 006	-2,5	-23,5	113 599	84 969	33,8	1,9
	Jun	1 898 937	162 531	-3,5	46,4	148 235	85 287	30,5	0,4
	Jul	1 610 775	146 205	-15,2	-10,0	209 907	85 887	41,6	0,7
	Aug	1 448 847	129 554	-10,1	-11,4	261 804	86 128	24,7	0,3
	Sep	1 333 362	132 625	-8,0	2,4	313 029	85 717	19,6	-0,5
	Okt	1 199 875	173 136	-10,0	30,5	348 364	84 582	11,3	-1,3
	Nov	1 103 449	203 907	-8,0	17,8	371 055	84 724	6,5	0,2
	Dez	1 034 543	173 382	-6,2	-15,0	389 861	81 803	5,1	-3,4
1992	Jan	520 591	214 376	-49,7	23,6	394 083	79 321	1,1	-3,0
	Feb	518 849	248 712	-0,3	16,0	399 561	79 916	1,4	0,8
	Mrz	493 940	266 021	-4,8	7,0	401 471	79 585	0,5	-0,4
	Apr	466 263	247 178	-5,6	-7,1	404 460	81 996	0,7	3,0
	Mai	436 533	246 017	-6,4	-0,5	404 853	80 460	0,1	-1,9
	Jun	417 383	228 956	-4,4	-6,9	401 880	80 501	-0,7	0,1
	Jul	337 758	158 514	-19,1	-30,8	388 692	80 157	-3,3	-0,4
	Aug	287 150	127 931	-15,0	-19,3	381 429	78 152	-1,9	-2,5
	Sep	251 476	204 473	-12,4	59,8	374 902	76 899	-1,7	-1,6
	Okt	240 017	326 625	-4,6	59,7	369 701	74 537	-1,4	-3,1
	Nov	236 571	477 845	-1,4	46,3	363 348	71 357	-1,7	-4,3
	Dez	233 431	649 583	-1,3	35,9	354 717	67 508	-2,4	-5,4
1993	Jan	214 487	856 799	-8,1	31,9	325 510	63 444	-8,2	-6,0
	Feb	234 934	1 041 652	9,5	21,6	314 574	61 146	-3,4	-3,6
	Mrz	246 006	1 061 494	4,7	1,9	302 257	58 597	-3,9	-4,2
	Apr	231 146	1 042 522	-6,0	-1,8	282 633	54 227	-6,5	-7,5
	Mai	215 064	938 653	-7,0	-10,0	268 427	49 830	-5,0	-8,1
	Jun	200 601	897 191	-6,7	-4,4	251 902	45 949	-6,2	-7,8
	Jul	155 331	525 082	-22,6	-41,5	223 227	43 985	-11,4	-4,3
	Aug	143 299	397 599	-7,7	-24,3	209 696	41 869	-6,1	-4,8

1) Beschäftigte in Maßnahmen zur Arbeitsbeschaffung.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Nummer 70

2 Erwerbstätigkeit
2.3 Arbeitsmarkt
2.3.2 Arbeitsmarktpolitische Maßnahm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	
			Prozent				Prozent	

Teilnehmer an Maßnahmen der Weiterbildung 1)**Personen im vorgezogenen Ruhestand 2)**

1991	Jan	.	358 972	.	-1,2	.	62 635	.	.
	Feb	138 200	367 967	.	2,5	.	62 470	.	-0,3
	Mrz	167 800	377 147	21,4	2,5	.	61 370	.	-1,8
	Apr	210 400	373 835	25,4	-0,9	3) 499 498	61 793	.	0,7
	Mai	239 000	375 384	13,6	0,4	508 365	61 729	1,8	-0,1
	Jun	272 400	374 673	14,0	-0,2	510 734	61 728	0,5	-0,0
	Jul	313 200	352 662	15,0	-5,9	544 047	63 424	6,5	2,7
	Aug	324 100	331 971	3,5	-5,9	566 477	64 294	4,1	1,4
	Sep	350 500	346 344	8,1	4,3	573 255	64 179	1,2	-0,2
	Okt	382 900	362 864	9,2	4,8	622 868	65 589	8,7	2,2
	Nov	410 400	377 349	7,2	4,0	640 606	65 892	2,8	0,5
	Dez	435 200	385 663	6,0	2,2	657 914	65 788	2,7	-0,2
1992	Jan	438 000	372 654	0,6	-3,4	771 645	69 584	17,3	5,8
	Feb	470 900	379 182	7,5	1,8	779 837	72 576	1,1	4,3
	Mrz	496 900	387 130	5,5	2,1	783 935	74 084	0,5	2,1
	Apr	507 300	383 809	2,1	-0,9	780 534	77 049	-0,4	4,0
	Mai	510 300	383 501	0,6	-0,1	779 856	78 585	-0,1	2,0
	Jun	509 300	380 532	-0,2	-0,8	780 396	79 427	0,1	1,1
	Jul	503 700	356 378	-1,1	-6,3	833 718	83 376	6,8	5,0
	Aug	493 900	335 289	-1,9	-5,9	837 463	84 816	0,4	1,7
	Sep	490 600	352 712	-0,7	5,2	835 396	85 411	-0,2	0,7
	Okt	499 200	365 300	1,8	3,6	837 317	90 760	0,2	6,3
	Nov	494 600	377 466	-0,9	3,3	835 990	93 962	-0,2	3,5
	Dez	479 600	397 040	-3,0	5,2	834 479	96 037	-0,2	2,2
1993	Jan	419 631	383 604	-12,5	-3,4	892 972	105 066	7,0	9,4
	Feb	419 834	377 972	0,0	-1,5	896 751	109 885	0,4	4,6
	Mrz	431 952	379 929	2,9	0,5	889 652	117 709	-0,8	7,1
	Apr	432 691	370 205	0,2	-2,6	877 678	123 778	-1,3	5,2
	Mai	427 798	363 825	-1,1	-1,7	866 529	126 869	-1,3	2,5
	Jun	410 524	353 537	-4,0	-2,8	856 778	129 359	-1,1	2,0
	Jul	378 592	325 815	-7,8	-7,8	847 577	132 568	-1,1	2,5
	Aug	343 959	306 906	-9,1	-5,8	840 032	...	-0,9	...

1) Teilnehmer an Maßnahmen zur beruflichen Fortbildung, Umschulung und Einarbeitung.

2) Empfänger von Vorruhestandsgeld (am Monatsende) und Altersübergangsgeld (Monatsmitte).

3) Bis 31.3.1991 traten 382 339 Personen in den vorgezogenen Ruhestand.

Nummer 71

2 Erwerbstätigkeit
2.3 Arbeitsmarkt
2.3.3 Arbeitslose am Monatsende nach Ländern
1000 Personen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1990						
Okt	85,3	77,5	136,1	93,4	91,4	53,0
Nov	92,8	84,1	151,2	101,6	99,2	60,3
Dez	101,1	89,6	164,4	113,4	106,9	66,8
1991						
Jan	115,3	112,1	200,1	130,5	127,3	71,9
Feb	120,8	116,7	204,8	139,1	131,3	74,2
Mrz	124,4	120,5	210,6	143,7	133,0	76,2
Apr	128,8	124,2	218,5	150,1	136,0	79,4
Mai	130,2	124,1	218,5	153,8	135,8	80,0
Jun	130,2	122,7	214,9	156,8	136,5	81,4
Jul	165,1	143,6	288,2	197,7	174,3	99,7
Aug	166,9	142,7	285,8	195,9	171,0	101,0
Sep	159,8	137,5	274,3	193,2	164,3	99,7
Okt	162,3	139,8	282,3	197,0	167,0	100,0
Nov	158,8	140,0	276,1	194,6	163,0	98,2
Dez	161,9	141,7	276,8	192,8	165,5	99,0
1992						
Jan	206,1	185,9	367,7	240,6	225,9	117,4
Feb	199,4	179,8	348,5	234,5	216,4	111,8
Mrz	189,4	173,5	328,4	222,4	202,0	104,4
Apr	184,3	172,0	320,5	221,2	196,4	101,6
Mai	179,0	163,7	307,1	215,5	186,0	97,9
Jun	176,1	158,5	300,3	211,9	181,0	95,5
Jul	184,2	164,7	325,9	221,0	196,0	96,5
Aug	181,2	161,3	318,5	218,9	194,5	94,3
Sep	173,3	150,4	302,6	211,4	184,0	89,1
Okt	173,9	149,7	298,9	207,6	180,1	87,3
Nov	172,9	151,2	293,9	204,7	177,0	86,7
Dez	175,0	152,9	295,0	207,3	182,0	88,6
1993						
Jan	186,4	164,7	320,3	229,4	200,1	93,5
Feb	182,8	161,3	318,4	227,1	198,4	92,7
Mrz	178,5	155,9	309,7	219,8	190,4	86,2
Apr	177,5	153,2	301,9	217,7	185,1	82,5
Mai	173,5	148,1	298,1	215,0	183,2	78,8
Jun	177,4	145,7	298,1	217,5	182,6	78,5
Jul	185,3	150,6	322,0	230,4	196,4	81,7
Aug	185,3	149,8	328,0	230,9	199,1	81,5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Nummer 72

2 Erwerbstätigkeit 2.3 Arbeitsmarkt 2.3.4 Arbeitslosenquote *) nach Ländern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1990 Okt	6,2	7,5	5,2	5,8	6,2	7,6
Nov	6,8	8,2	5,8	6,3	6,8	8,4
Dez	7,4	8,7	6,2	7,0	7,3	9,3
1991 Jan	8,4	10,9	7,6	8,1	8,7	10,1
Feb	8,8	11,3	7,8	8,6	9,0	10,4
Mrz	9,1	11,7	8,0	8,9	9,1	10,7
Apr	9,4	12,1	8,3	9,3	9,3	11,1
Mai	9,5	12,1	8,3	9,5	9,3	11,2
Jun	9,5	11,9	8,1	9,7	9,4	11,4
Jul	12,1	13,9	10,9	12,2	12,0	14,0
Aug	12,2	13,9	10,8	12,1	11,7	14,1
Sep	11,7	13,4	10,4	12,0	11,3	14,0
Okt	11,9	13,6	10,7	12,2	11,5	14,0
Nov	11,6	13,6	10,5	12,0	11,2	13,7
Dez	11,8	13,8	10,5	11,9	11,4	13,9
1992 Jan	16,8	19,0	15,8	16,9	18,0	17,2
Feb	16,3	18,4	15,0	16,4	17,3	16,4
Mrz	15,4	17,7	14,1	15,6	16,1	15,3
Apr	15,0	17,6	13,8	15,5	15,7	14,9
Mai	14,6	16,7	13,2	15,1	14,8	14,3
Jun	14,4	16,2	12,9	14,9	14,4	14,0
Jul	15,0	16,8	14,0	15,5	15,6	14,1
Aug	14,7	16,6	13,7	15,4	15,5	13,8
Sep	14,1	15,4	13,0	14,8	14,7	13,0
Okt	14,1	15,4	12,9	14,6	14,4	12,8
Nov	14,0	15,5	12,7	14,4	14,1	12,7
Dez	14,2	15,7	12,7	14,5	14,5	13,0
1993 Jan	15,8	19,0	15,1	17,5	16,9	15,4
Feb	15,5	18,6	15,0	17,4	16,8	15,3
Mrz	15,1	18,0	14,6	16,8	16,1	14,2
Apr	15,0	17,7	14,2	16,7	15,6	13,6
Mai	14,7	17,1	14,0	16,4	15,5	13,0
Jun	15,0	16,8	14,0	16,6	15,4	13,0
Jul	15,7	17,4	15,2	17,6	16,6	13,5
Aug	15,7	17,3	15,4	17,7	16,6	13,5

*) Arbeitslose je 100 abhängige zivile Erwerbspersonen. Der Arbeitslosenquote liegen bis Dezember 1992 die arbeitsortbezogenen Ergebnisse der Berufstätigenerhebungen, für 1993 die wohnortbezogenen Ergebnisse der Beschäftigenerhebung vom 30.6.1992 zugrunde.

Nummer 75

3 Preise

3.2 Preisindex für die Lebenshaltung

3.2.1 Alle Arbeitnehmerhaushalte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7.1990 bis 30.6.1991	1985	Veränderung gegenüber				
	= 100		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1 D	108,3	110,7	 		X	3,5	
1992 D	120,4	115,1	 		11,2	4,0	
1990					 		
Okt	96,8	108,2	1,6	0,7		3,3	
Nov	96,6	108,0	-0,2	-0,2		3,0	
Dez	97,3	108,1	0,7	0,1		2,8	
1991					 		
Jan	102,5	108,8	5,3	0,6		2,8	
Feb	102,9	109,1	0,4	0,3		2,7	
Mrz	104,1	109,0	1,2	-0,1		2,5	
Apr	105,1	109,5	1,0	0,5		2,8	
Mai	105,6	109,9	0,5	0,4		3,0	
Jun	105,9	110,5	0,3	0,5		3,5	
Jul	106,7	111,5	0,8	0,9	13,8	4,4	
Aug	106,8	111,5	0,1	0,0	13,7	4,1	
Sep	107,1	111,7	0,3	0,2	12,4	3,9	
Okt	117,3	112,0	9,5	0,3	21,2	3,5	
Nov	118,0	112,5	0,6	0,4	22,2	4,2	
Dez	118,0	112,6	0,0	0,1	21,3	4,2	
1992							
Jan	118,8	113,1	0,7	0,4	15,9	4,0	
Feb	119,2	113,8	0,3	0,6	15,8	4,3	
Mrz	119,8	114,2	0,5	0,4	15,1	4,8	
Apr	120,0	114,5	0,2	0,3	14,2	4,6	
Mai	120,6	115,0	0,5	0,4	14,2	4,6	
Jun	120,8	115,2	0,2	0,2	14,1	4,3	
Jul	120,7	115,2	-0,1	0,0	13,1	3,3	
Aug	120,6	115,4	-0,1	0,2	12,9	3,5	
Sep	120,7	115,7	0,1	0,3	12,7	3,6	
Okt	120,8	116,1	0,1	0,3	3,0	3,7	
Nov	121,1	116,7	0,2	0,5	2,6	3,7	
Dez	121,3	116,8	0,2	0,1	2,8	3,7	
1993							
Jan	129,4	118,1	6,7	1,1	8,9	4,4	
Feb	130,1	118,6	0,5	0,4	9,1	4,2	
Mrz	130,3	119,0	0,2	0,3	8,8	4,2	
Apr	130,8	119,4	0,4	0,3	9,0	4,3	
Mai	130,9	119,8	0,1	0,3	8,5	4,2	
Jun	131,4	120,0	0,4	0,2	8,8	4,2	
Jul	131,4	120,2	0,0	0,2	8,9	4,3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76

3 Preise
3.2 Preisindex für die Lebenshaltung
3.2.2 Ausgewählte Haushaltseinkommensgrupp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Zeitraum	4-Personen-Arbeitnehmerhaushalte mit höherem Einkommen 1)			4-Personen-Arbeitnehmerhaushalte mit mittlerem Einkommen 2)			2-Personen-Rentnerhaushalte 3)		
	1.7.1990 - 30.6.1991	Veränderung gegenüber		1.7.1990 - 30.6.1991	Veränderung gegenüber		1.7.1990 - 30.6.1991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	Vorjahresmonat		Vormonat	Vorjahresmonat		Vormonat	Vorjahresmonat
	= 100	Prozent		= 100	Prozent		= 100	Prozent	
1990 Okt	97,2	1,6	 	96,9	1,6	 	96,2	1,1	
Nov	97,0	-0,2	 	96,6	-0,3	 	96,2	0,0	
Dez	97,7	0,7	 	97,4	0,8	 	96,9	0,7	
1991 Jan	102,3	4,7	 	102,5	5,2	 	102,5	5,8	
Feb	102,6	0,3	 	102,8	0,3	 	103,2	0,7	
Mrz	103,7	1,1	 	104,0	1,2	 	104,1	0,9	
Apr	104,8	1,1	 	105,2	1,2	 	105,1	1,0	
Mai	105,4	0,6	 	105,7	0,5	 	105,5	0,4	
Jun	105,6	0,2	 	105,9	0,2	 	105,9	0,4	
Jul	106,5	0,9	13,7	107,0	1,0	14,3	106,2	0,3	12,0
Aug	106,7	0,2	13,4	107,1	0,1	14,2	106,2	0,0	12,6
Sep	107,0	0,3	11,8	107,4	0,3	12,6	106,4	0,2	11,8
Okt	116,3	8,7	19,7	116,6	8,6	20,3	117,8	10,7	22,5
Nov	116,9	0,5	20,5	117,2	0,5	21,3	118,5	0,6	23,2
Dez	116,9	0,0	19,7	117,3	0,1	20,4	118,5	0,0	22,3
1992 Jan	117,6	0,6	15,0	117,9	0,5	15,0	119,5	0,8	16,6
Feb	118,0	0,3	15,0	118,4	0,4	15,2	119,9	0,3	16,2
Mrz	118,7	0,6	14,5	119,0	0,5	14,4	120,4	0,4	15,7
Apr	118,9	0,2	13,5	119,2	0,2	13,3	120,7	0,2	14,8
Mai	119,4	0,4	13,3	119,8	0,5	13,3	121,3	0,5	15,0
Jun	119,6	0,2	13,3	120,0	0,2	13,3	121,4	0,1	14,6
Jul	119,5	-0,1	12,2	119,9	-0,1	12,1	121,3	-0,1	14,2
Aug	119,5	0,0	12,0	119,8	-0,1	11,9	121,2	-0,1	14,1
Sep	119,5	0,0	11,7	119,9	0,1	11,6	121,3	0,1	14,0
Okt	119,6	0,1	2,8	120,0	0,1	2,9	121,5	0,2	3,1
Nov	119,9	0,3	2,6	120,4	0,3	2,7	121,7	0,2	2,7
Dez	120,1	0,2	2,7	120,5	0,1	2,7	121,8	0,1	2,8
1993 Jan	127,9	6,5	8,8	128,0	6,2	8,6	130,4	7,1	9,1
Feb	128,5	0,5	8,9	128,6	0,5	8,6	131,0	0,5	9,3
Mrz	128,7	0,2	8,4	128,8	0,2	8,2	131,1	0,1	8,9
Apr	129,2	0,4	8,7	129,4	0,5	8,6	131,7	0,5	9,1
Mai	129,3	0,1	8,3	129,6	0,2	8,2	131,8	0,1	8,7
Jun	129,8	0,4	8,5	130,0	0,3	8,3	132,4	0,5	9,1
Jul	129,8	0,0	8,6	130,0	0,0	8,4	132,3	-0,1	9,1

1) Durchschnittliche monatliche Haushaltsausgaben im Zeitraum vom 1.7.1990 bis 30.6. 1991 in Höhe von 2 888 DM.

2) Durchschnittliche monatliche Haushaltsausgaben im Zeitraum vom 1.7.1990 bis 30.6. 1991 in Höhe von 2 296 DM.

3) Durchschnittliche monatliche Haushaltsausgaben im Zeitraum vom 1.7.1990 bis 30.6. 1991 in Höhe von 1 441 DM.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77

3 Preise

3.3 Preisindizes für Neubauten in konventioneller Bauart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989	1985	Veränderung gegenüber			
	=100		Vorberichts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Wohngebäude (Bauleistungen am Bauwerk)

1991 D	164,3	124,3	 		.	6,8
1992 D	182,4	131,3	 		11,0	5,6
1990 Nov	149,6	118,6	4,9	0,9	.	7,0
1991 Feb	157,3	120,5	5,1	1,6	.	6,4
Mai	162,9	124,3	3,6	3,2	.	7,0
Aug	166,1	125,8	2,0	1,2	16,5	7,0
Nov	170,8	126,5	2,8	0,6	14,2	6,7
1992 Feb	176,8	128,5	3,5	1,6	12,4	6,6
Mai	181,5	131,0	2,7	1,9	11,4	5,4
Aug	184,4	132,7	1,6	1,3	11,0	5,5
Nov	186,8	133,1	1,3	0,3	9,4	5,2
1993 Feb	191,6	135,4	2,6	1,7	8,4	5,4
Mai	194,9	137,4	1,7	1,5	7,4	4,9

Gewerbliche Betriebsgebäude

1991 D	145,1	124,4	 		.	6,2
1992 D	163,4	130,5	 		12,6	4,9
1990 Nov	134,5	119,5	1,1	0,9	.	6,8
1991 Feb	138,5	121,1	3,0	1,3	.	6,2
Mai	142,6	124,1	3,0	2,5	.	6,4
Aug	145,8	125,8	2,2	1,4	9,5	6,3
Nov	153,3	126,5	5,1	0,6	14,0	5,9
1992 Feb	159,0	128,1	3,7	1,3	14,8	5,8
Mai	162,2	130,1	2,0	1,6	13,7	4,8
Aug	165,5	131,8	2,0	1,3	13,5	4,8
Nov	167,0	131,9	0,9	0,1	8,9	4,3
1993 Feb	170,8	134,0	2,3	1,6	7,4	4,6
Mai	172,7	135,6	1,1	1,2	6,5	4,2

Straßenbau

1991 D	115,4	121,0	 		.	6,9
1992 D	124,6	127,7	 		8,0	5,5
1990 Nov	111,9	115,5	-0,2	1,1	.	7,1
1991 Feb	111,8	117,3	-0,1	1,6	.	6,6
Mai	113,3	121,0	1,3	3,2	.	7,0
Aug	116,5	122,4	2,8	1,2	3,9	7,2
Nov	119,8	123,3	2,8	0,7	7,1	6,8
1992 Feb	123,1	125,3	2,8	1,6	10,1	6,8
Mai	126,5	127,7	2,8	1,9	11,7	5,5
Aug	124,5	128,9	-1,6	0,9	6,9	5,3
Nov	124,3	128,9	-0,2	0,0	3,8	4,5
1993 Feb	126,1	130,5	1,4	1,2	2,4	4,2
Mai	127,5	131,6	1,1	0,8	0,8	3,1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78

4 Einkommen

4.1 Ergebnisse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1)
	Mrd DM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Von Inländern empfangene Bruttolohn- und -gehaltsumme							
1991	155,9	1 155,5	1 311,4	X	7,9	X	11,9
1992	186,6	1 225,6	1 412,1	19,7	6,1	7,7	13,2
1990 2. Hj.	66,2	572,2	638,4	X	X	X	10,4
1991 1. Hj.	70,3	535,9	606,2	X	X	X	11,6
2. Hj.	85,6	619,7	705,2	29,2	8,3	10,5	12,1
1992 1. Hj.	84,2	567,5	651,7	19,7	5,9	7,5	12,9
2. Hj.	102,4	658,1	760,5	19,7	6,2	7,8	13,5
Im Inland entstandene Bruttolohn- und -gehaltsumme							
1991	145,1	1 163,1	1 308,2	X	8,7	X	11,1
1992	172,5	1 237,9	1 410,4	18,9	6,4	7,8	12,2
1990 2. Hj.	63,6	572,7	636,3	X	X	X	10,0
1991 1. Hj.	66,0	538,4	604,4	X	X	X	10,9
2. Hj.	79,1	624,7	703,7	24,3	9,1	10,6	11,2
1992 1. Hj.	77,6	573,1	650,7	17,6	6,4	7,7	11,9
2. Hj.	94,9	664,8	759,7	20,0	6,4	8,0	12,5
Verfügbares Einkommen der privaten Haushalte							
1991	193,8	1 650,5	1 844,3	X	7,2	X	10,5
1992	244,2	1 732,3	1 976,5	26,0	5,0	7,2	12,4
1990 2. Hj.	83,1	791,9	875,0	X	X	X	9,5
1991 1. Hj.	82,8	805,1	887,9	X	X	X	9,3
2. Hj.	111,1	845,4	956,5	33,7	6,8	9,3	11,6
1992 1. Hj.	114,3	838,3	952,5	38,0	4,1	7,3	12,0
2. Hj.	130,0	894,0	1 024,0	17,0	5,7	7,1	12,7
darunter: empfangene laufende Übertragungen							
1991	71,9	401,5	473,4	X	X	X	15,2
1992	93,0	430,7	523,7	29,4	7,3	10,6	17,8
1990 2. Hj.	.	194,6	.	X	X	X	X
1991 1. Hj.	33,1	194,4	227,5	X	X	X	14,5
2. Hj.	38,8	207,1	245,9	X	6,4	X	15,8
1992 1. Hj.	44,4	209,2	253,6	34,1	7,6	11,5	17,5
2. Hj.	48,6	221,5	270,1	25,2	7,0	9,8	18,0

1) A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79

4 Einkommen

4.1 Ergebnisse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land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Mill DM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Früheres Bundes- gebiet = 100
				Prozent			

Bruttolohn- und -gehaltssumme monatlich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Inländer)

1991	1 820	3 710	3 300	X	5,9	X	49,1
1992	2 470	3 920	3 630	35,8	5,3	10,0	63,0
1990 3. Vj.	1 290	3 450	2 910	X	4,3	X	37,4
4. Vj.	1 420	3 970	3 370	X	5,4	X	33,8
1991 1. Vj.	1 500	3 320	2 900	X	3,9	X	45,2
2. Vj.	1 650	3 610	3 180	X	6,7	X	45,7
3. Vj.	1 940	3 680	3 310	50,4	6,7	13,7	52,7
4. Vj.	2 240	4 230	3 820	57,7	6,3	13,4	53,0
1992 1. Vj.	2 090	3 530	3 250	39,8	6,3	11,8	59,2
2. Vj.	2 320	3 740	3 460	40,8	3,6	8,9	62,0
3. Vj.	2 570	3 940	3 670	32,4	7,1	10,8	65,2
4. Vj.	2 900	4 460	4 160	29,9	5,4	8,9	65,0

Bruttolohn- und -gehaltssumme monatlich je beschäftigten Arbeitnehmer (Arbeitsort)

1991	1 760	3 702	3 299				47,5
1992	2 420	3 903	3 631				62,0
1990 3. Vj.	1 270	3 445	2 911				36,9
4. Vj.	1 380	3 966	3 369				34,8
1991 1. Vj.	1 460	3 313	2 900				44,1
2. Vj.	1 600	3 598	3 174				44,5
3. Vj.	1 880	3 672	3 312				51,2
4. Vj.	2 170	4 214	3 817				51,5
1992 1. Vj.	2 040	3 519	3 244				58,0
2. Vj.	2 270	3 723	3 663				61,0
3. Vj.	2 530	3 924	3 670				64,5
4. Vj.	2 860	4 441	4 156				64,4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0

4 Einkommen
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1 Arbeiter und Angestellte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1)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DM		Veränderung gegenüber				Früheres Bundesgebiet = 100 1)
			Vorberichtszeitraum		Oktober 1990		
			Prozent				

Industrie (einschließlich Hoch- und Tiefbau mit Handwerk)

1991 D	1 963	4 168	X	X	 	 	47,1
1992 D	2 559	4 398	30,4	4,0	 	 	58,2
1990 Jul	1 393	3 983	X	2,8	X	X	35,0
1990 Okt	1 588	4 021	14,0	1,0	0,0	0,0	39,5
1991 Jan	1 667	4 010	5,0	-0,3	5,0	-0,3	41,6
1991 Apr	1 926	4 084	15,5	1,8	21,3	1,6	47,2
1991 Jul	1 996	4 213	3,6	3,2	25,7	4,8	47,4
1991 Okt	2 086	4 251	4,5	0,9	31,4	5,7	49,1
1992 Jan	2 211	4 255	6,0	0,1	39,2	5,8	52,0
1992 Apr	2 477	4 304	12,0	1,2	56,0	7,0	57,6
1992 Jul	2 632	4 450	6,3	3,4	65,7	10,7	59,1
1992 Okt	2 711	4 475	3,0	0,6	70,7	11,3	60,6

Hoch- und Tiefbau (mit Handwerk)

1991 D	2 502	4 045	X	X	 	 	61,9
1992 D	2 973	4 218	18,8	4,3	 	 	70,5
1990 Jul	1 702	3 851	X	2,3	X	X	44,2
1990 Okt	1 933	3 869	13,6	0,5	0,0	0,0	50,0
1991 Jan	2 034	3 617	5,2	-6,5	5,2	-6,5	56,2
1991 Apr	2 454	4 060	20,6	12,2	27,0	4,9	60,4
1991 Jul	2 541	4 136	3,5	1,9	31,5	6,9	61,4
1991 Okt	2 705	4 138	6,5	0,0	39,9	7,0	65,4
1992 Jan	2 659	3 992	-1,7	-3,5	37,6	3,2	66,6
1992 Apr	2 882	4 096	8,4	2,6	49,1	5,9	70,4
1992 Jul	3 160	4 316	9,6	5,4	63,5	11,6	73,2
1992 Okt	3 099	4 309	-1,9	-0,2	60,3	11,4	71,9

Groß- und Einzelhandel, Kreditinstitute, Versicherungsgewerbe 2)

1991 D	1 819	3 892	X	X	 	 	46,7
1992 D	2 509	4 183	37,9	7,5	 	 	60,0
1990 Jul	.	3 673	X	0,8	X	X	X
1990 Okt	1 500	3 693	X	0,5	0,0	0,0	40,6
1991 Jan	1 565	3 799	4,3	2,9	4,3	2,9	41,2
1991 Apr	1 725	3 845	10,2	1,2	15,0	4,1	44,9
1991 Jul	1 807	3 912	4,8	1,7	20,5	5,9	46,2
1991 Okt	1 994	3 948	10,3	0,9	32,9	6,9	50,5
1992 Jan	2 159	4 046	8,3	2,5	43,9	9,6	53,4
1992 Apr	2 382	4 134	10,3	2,2	58,8	11,9	57,6
1992 Jul	2 572	4 211	8,0	1,9	71,5	14,0	61,1
1992 Okt	2 658	4 248	3,3	0,9	77,2	15,0	62,6

1) 1992 ohne Bremen.

2) Nur Angestellte.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1

4 Einkommen
4.2 Durchschnittliche Bruttonomatsverdienste
4.2.2 Arbeiter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DM		Veränderung gegenüber				Früheres Bundesgebiet = 100 1)
			Vorberichtszeitraum		Oktober 1990		
			Prozent				

Industrie (einschließlich Hoch- und Tiefbau mit Handwerk)

1991 D	1 847	3 672	X	X	 		50,3
1992 D	2 402	3 846	30,0	4,7	 		62,5
1991 Jan	1 573	3 511	0,0	-1,3	0,0	-1,3	44,8
Apr	1 803	3 602	14,6	2,6	14,6	1,2	50,1
Jul	1 868	3 711	3,6	3,0	18,8	4,3	50,3
Okt	1 968	3 741	5,4	0,8	25,1	5,1	52,6
1992 Jan	2 054	3 700	4,4	-1,1	30,6	4,0	55,5
Apr	2 303	3 771	12,1	1,9	46,4	6,0	61,1
Jul	2 456	3 899	6,6	3,4	56,1	9,6	63,0
Okt	2 561	3 910	4,3	0,3	62,8	9,9	65,5

Industrie (ohne Bauindustrie)

1991 D	1 708	3 645	X	X	 		46,9
1992 D	2 216	3 826	29,7	5,0	 		57,9
1991 Jan	1 499	3 532	X	X	0,3	-0,4	42,4
Apr	1 673	3 576	11,6	1,2	12,0	0,8	46,8
Jul	1 725	3 689	3,1	3,2	15,5	4,0	46,8
Okt	1 790	3 719	3,8	0,8	19,8	4,9	48,1
1992 Jan	1 940	3 705	8,4	-0,4	29,9	4,5	52,4
Apr	2 159	3 756	11,3	1,4	44,5	5,9	57,5
Jul	2 278	3 871	5,5	3,1	52,5	9,2	58,8
Okt	2 345	3 884	2,9	0,3	57,0	9,5	60,4

Hoch- und Tiefbau (mit Handwerk)

1991 D	2 411	3 802	X	X	 		63,4
1992 D	2 860	3 982	18,6	4,7	 		71,8
1991 Jan	1 947	3 272	2,8	-10,4	2,8	-10,7	59,5
Apr	2 377	3 837	22,1	17,3	25,5	5,1	61,9
Jul	2 442	3 906	2,7	1,8	28,9	7,1	62,5
Okt	2 603	3 906	6,6	0,0	37,4	7,1	66,6
1992 Jan	2 513	3 654	-3,5	-6,5	32,9	-0,4	68,8
Apr	2 765	3 877	10,0	6,1	46,2	5,7	71,3
Jul	3 034	4 096	9,7	5,6	60,4	11,6	74,1
Okt	2 993	4 084	-1,4	-0,3	58,1	11,3	73,3

1) 1992 ohne Brem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2

4 Einkommen
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2 Arbeiter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1)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1)
	DM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Oktober 1990		
			Prozent				

Grundstoff- und Produktionsgüterindustrie

1991 D	1 642	3 841	X	X	 		42,7
1992 D	2 148	4 051	30,8	5,5	 		53,0
1991 Jan	1 460	3 728	-3,2	-0,1	-3,2	-0,1	39,2
Apr	1 629	3 776	11,6	1,3	8,0	1,2	43,1
Jul	1 673	3 854	2,7	2,1	10,9	3,3	43,4
Okt	1 699	3 915	1,6	1,6	12,6	4,9	43,4
1992 Jan	1 878	3 918	10,5	0,1	24,5	5,0	47,9
Apr	2 098	4 006	11,7	2,2	39,1	7,3	52,4
Jul	2 096	4 093	-0,1	2,2	38,9	9,7	51,2
Okt	2 280	4 102	8,8	0,2	51,2	9,9	55,6

Investitionsgüterindustrie

1991 D	1 703	3 732	X	X	 		45,6
1992 D	2 155	3 894	26,5	4,3	 		55,3
1991 Jan	1 521	3 602	0,6	-0,6	0,6	-0,6	42,2
Apr	1 690	3 632	11,1	0,8	11,8	0,2	46,5
Jul	1 725	3 789	2,1	4,3	14,1	4,6	45,5
Okt	1 764	3 798	2,3	0,2	16,7	4,8	46,4
1992 Jan	1 827	3 776	3,6	-0,6	20,8	4,2	48,4
Apr	2 125	3 802	16,3	0,7	40,5	4,9	55,9
Jul	2 179	3 958	2,5	4,1	44,0	9,2	55,1
Okt	2 281	3 950	4,7	-0,2	50,8	9,0	57,7

Verbrauchsgüterindustrie

1991 D	1 586	3 224	X	X	 		49,2
1992 D	1 966	3 387	24,0	5,1	 		58,0
1991 Jan	1 430	3 128	5,5	0,3	5,5	0,3	45,7
Apr	1 503	3 172	5,1	1,4	10,8	1,7	47,4
Jul	1 577	3 246	4,9	2,3	16,3	4,0	48,6
Okt	1 725	3 289	9,4	1,3	27,2	5,4	52,4
1992 Jan	1 814	3 288	5,2	-0,0	33,8	5,4	55,2
Apr	1 943	3 335	7,1	1,4	43,3	6,9	58,3
Jul	2 034	3 409	4,7	2,2	50,0	9,2	59,7
Okt	2 072	3 444	1,9	1,0	52,9	10,3	60,2

Nahrungs- und Genussmittelindustrie

1991 D	1 625	3 398	X	X	 		47,8
1992 D	2 050	3 571	26,2	5,1	 		57,4
1991 Jan	1 421	3 294	-0,7	-1,4	-0,7	-1,4	43,1
Apr	1 538	3 354	8,2	1,8	7,5	0,4	45,9
Jul	1 616	3 402	5,1	1,4	12,9	1,8	47,5
Okt	1 781	3 454	10,2	1,5	24,5	3,4	51,6
1992 Jan	1 799	3 430	1,0	-0,7	25,7	2,7	52,4
Apr	2 006	3 529	11,5	2,9	40,2	5,7	56,8
Jul	2 129	3 567	6,1	1,1	48,8	6,8	59,7
Okt	2 189	3 661	2,8	2,6	52,9	9,6	59,8

1) 1992 ohne Brem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3

4 Einkommen
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3 Angestellte

Zeitraum	Neue Bundesländer	Früheres Bundesgebiet 1)	Neue Bundesländer	Früheres Bundesgebiet 1)	Neue Bundesländer	Früheres Bundesgebiet 1)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1)
	DM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Oktober 1990		
			Prozent				

Industrie (einschließlich Hoch- und Tiefbau mit Handwerk), Handel, Kreditinstitute, Versicherungsgewerbe

1991 D	2 083	4 651	X	X	 		44,8
1992 D	2 796	4 888	34,2	5,1	 		57,2
1991 Jan	1 749	4 511	6,6	1,6	6,6	1,6	38,8
Apr	2 017	4 563	15,3	1,2	22,9	2,7	44,2
Jul	2 124	4 691	5,3	2,8	29,4	5,6	45,3
Okt	2 230	4 731	5,0	0,9	35,9	6,5	47,1
1992 Jan	2 413	4 729	8,2	-0,0	47,0	6,5	51,0
Apr	2 698	4 804	11,8	1,6	64,4	8,2	56,2
Jul	2 878	4 933	6,7	2,7	75,4	11,1	58,3
Okt	2 955	4 970	2,7	0,8	80,1	12,0	59,5

Industrie (einschließlich Hoch- und Tiefbau mit Handwerk)

1991 D	2 195	5 278	X	X	 		41,6
1992 D	2 916	5 570	32,8	5,5	 		52,4
1991 Jan	1 836	5 102	9,4	0,6	9,4	0,6	36,0
Apr	2 145	5 157	16,8	1,1	27,8	1,7	41,6
Jul	2 244	5 337	4,6	3,5	33,7	5,2	42,0
Okt	2 323	5 381	3,5	0,8	38,4	6,1	43,2
1992 Jan	2 519	5 403	8,4	0,4	50,1	6,5	46,6
Apr	2 824	5 450	12,1	0,9	68,3	7,5	51,8
Jul	2 998	5 632	6,2	3,3	78,7	11,0	53,2
Okt	3 081	5 665	2,8	0,6	83,7	11,7	54,4

Industrie (ohne Bauindustrie)

1991 D	2 116	5 278	X	X	 		40,1
1992 D	2 820	5 575	33,3	5,6	 		50,6
1991 Jan	1 785	5 106	X	X	9,0	0,7	35,0
Apr	2 083	5 155	16,7	1,0	27,2	1,6	40,4
Jul	2 167	5 336	4,0	3,5	32,3	5,2	40,6
Okt	2 230	5 382	2,9	0,9	36,1	6,1	41,4
1992 Jan	2 437	5 411	9,3	0,5	48,8	6,7	45,0
Apr	2 751	5 456	12,9	0,8	67,9	7,5	50,4
Jul	2 906	5 636	5,6	3,3	77,4	11,1	51,6
Okt	2 974	5 669	2,3	0,6	81,6	11,7	52,5

Hoch- und Tiefbau (mit Handwerk)

1991 D	2 854	5 263	X	X	 		54,2
1992 D	3 535	5 462	23,9	3,8	 		64,7
1991 Jan	2 313	5 015	9,8	-0,1	9,8	-0,1	46,1
Apr	2 715	5 191	17,4	3,5	28,9	3,4	52,3
Jul	2 921	5 342	7,6	2,9	38,7	6,4	54,7
Okt	3 111	5 350	6,5	0,1	47,7	6,5	58,1
1992 Jan	3 169	5 230	1,9	-2,2	50,5	4,2	60,6
Apr	3 379	5 320	6,6	1,7	60,4	5,9	63,5
Jul	3 721	5 555	10,1	4,4	76,6	10,6	67,0
Okt	3 701	5 573	-0,5	0,3	75,8	10,9	66,4

1) 1992 ohne Brem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5

4 Einkommen
4.2 Durchschnittliche Bruttomonatsverdienste
4.2.3 Angestellte

Zeitraum	Neue Bundesländer	Früheres Bundesgebiet 1)	Veränderung gegenüber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1)
			Neue Bundesländer	Früheres Bundesgebiet 1)	Prozent		
					Vorberichtszeitraum	Oktober 1990	
DM							

Groß- und Einzelhandel, Kreditinstitute, Versicherungsgewerbe

1991 D	1 819	3 892	X	X	 		46,7
1992 D	2 509	4 183	37,9	7,5	 		60,0
1991 Jan	1 565	3 799	4,3	2,9	4,3	2,9	41,2
Apr	1 725	3 845	10,2	1,2	15,0	4,1	44,9
Jul	1 807	3 912	4,8	1,7	20,5	5,9	46,2
Okt	1 994	3 948	10,3	0,9	32,9	6,9	50,5
1992 Jan	2 159	4 046	8,3	2,5	43,9	9,6	53,4
Apr	2 382	4 134	10,3	2,2	58,8	11,9	57,6
Jul	2 572	4 211	8,0	1,9	71,5	14,0	61,1
Okt	2 658	4 248	3,3	0,9	77,2	15,0	62,6

Großhandel

1991 D	1 869	4 121	X	X	 		45,4
1992 D	2 454	4 497	31,3	9,1	 		54,6
1991 Jan	1 640	4 015	8,2	1,4	8,2	1,4	40,8
Apr	1 774	4 061	8,2	1,1	17,0	2,5	43,7
Jul	1 847	4 144	4,1	2,0	21,8	4,6	44,6
Okt	2 048	4 185	10,9	1,0	35,1	5,7	48,9
1992 Jan	2 164	4 348	5,7	3,9	42,7	9,8	49,8
Apr	2 360	4 448	9,1	2,3	55,7	12,3	53,1
Jul	2 494	4 527	5,7	1,8	64,6	14,4	55,1
Okt	2 590	4 567	3,8	0,9	70,8	15,4	56,7

Einzelhandel

1991 D	1 657	3 229	X	X	 		51,3
1992 D	2 177	3 464	31,4	7,3	 		62,8
1991 Jan	1 467	3 146	14,8	1,6	14,8	1,6	46,6
Apr	1 595	3 172	8,7	0,8	24,8	2,5	50,3
Jul	1 623	3 261	1,8	2,8	27,0	5,3	49,8
Okt	1 806	3 273	11,3	0,4	41,3	5,7	55,2
1992 Jan	1 952	3 352	8,1	2,4	52,7	8,2	58,2
Apr	2 059	3 407	5,5	1,6	61,1	10,0	60,4
Jul	2 208	3 491	7,2	2,5	72,7	12,7	63,2
Okt	2 314	3 526	4,8	1,0	81,0	13,8	65,6

Kreditinstitute

1991 D	2 003	4 279	X	X	 		46,8
1992 D	2 703	4 527	34,9	5,8	 		59,7
1991 Jan	1 738	4 214	8,8	4,4	8,8	4,4	41,2
Apr	1 952	4 260	12,3	1,1	22,2	5,5	45,8
Jul	2 081	4 286	6,6	0,6	30,2	6,2	48,6
Okt	2 084	4 311	0,1	0,6	30,4	6,8	48,3
1992 Jan	2 286	4 368	9,7	1,3	43,1	8,2	52,3
Apr	2 641	4 491	15,5	2,8	65,3	11,2	58,8
Jul	2 824	4 563	6,9	1,6	76,7	13,0	61,9
Okt	2 831	4 587	0,2	0,5	77,0	13,6	61,7

1) 1992 ohne Brem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6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
5.1.1 Ausgabefähige Einkommen und Einnahmen sowie Veränderungen der Vermögens- und Finanzkonten

Zeitraum	Arbeiter- und Angestelltenhaushalte Ehepaar/Lebenspartner mit 2 Kindern			2-Personen-Rentnerhaushalte ohne Arbeitseinkommen		
	absolut	Veränderung gegenüber		absolut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DM 1)	Prozent		DM 1)	Prozent	

Ausgabefähige Einkommen und Einnahmen 2)

1989	2 318	 		1 095	 	
1990	X	 		X	 	
1991	3 154	 		1 887	 	
1992	3 991	26,6	26,6	2 414	27,9	27,9
1990 1. Hj.	2 656	X	X	1 308	X	X
2. Hj.	2 743	3,3	X	1 563	19,5	X
1991 1. Hj.	2 820	2,8	6,2	1 720	10,0	31,5
2. Hj.	3 488	23,7	27,2	2 054	19,4	31,4
1992 1. Hj.	3 615	3,6	28,2	2 313	12,6	34,5
2. Hj.	4 368	20,8	25,2	2 515	8,7	22,4
1990 3. Vj.	2 510	X	X	1 532	X	X
4. Vj.	2 976	18,6	X	1 595	4,1	X
1991 1. Vj.	2 720	-8,6	4,2	1 687	5,8	21,8
2. Vj.	2 919	7,3	8,1	1 753	3,9	42,4
3. Vj.	3 236	10,9	28,9	2 031	15,9	32,6
4. Vj.	3 740	15,6	25,7	2 078	2,3	30,3
1992 1. Vj.	3 544	-5,2	30,3	2 326	11,9	37,9
2. Vj.	3 685	4,0	26,2	2 301	-1,1	31,3
3. Vj.	4 218	14,5	30,3	2 482	7,9	22,2
4. Vj.	4 517	7,1	20,8	2 547	2,6	22,6

Veränderung der Vermögens- und Finanzkonten

		3)		3)
1989	+ 296	12,8	+ 25	2,3
1990	X	X	X	X
1991	+ 375	11,9	+ 139	7,4
1992	+ 687	17,2	+ 228	9,4
1990 1. Hj.	+ 562	21,2	+ 74	5,7
2. Hj.	+ 180	6,6	+ 121	7,7
1991 1. Hj.	+ 300	10,6	+ 91	5,3
2. Hj.	+ 450	12,9	+ 187	9,1
1992 1. Hj.	+ 590	16,3	+ 262	11,3
2. Hj.	+ 784	18,0	+ 193	7,7
1990 3. Vj.	- 36	X	+ 155	10,1
4. Vj.	+ 397	13,3	+ 86	5,4
1991 1. Vj.	+ 290	10,7	+ 229	13,6
2. Vj.	+ 311	10,7	- 47	X
3. Vj.	+ 284	8,8	+ 189	9,3
4. Vj.	+ 617	16,5	+ 184	8,9
1992 1. Vj.	+ 714	20,1	+ 396	17,0
2. Vj.	+ 466	12,6	+ 128	5,6
3. Vj.	+ 772	18,3	+ 270	10,9
4. Vj.	+ 797	17,6	+ 116	4,5

*)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1) Angaben bis 1. Halbjahr 1990 in Mark der DDR, ab 2. Halbjahr 1990 in DM.

2) Haushaltsbruttoeinkommen einschließlich sonstiger Einnahmen, abzüglich Steuern auf Einkommen und Vermögen sowie Pflichtbeiträge zur Sozialversicherung.

3) Sparquote,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7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Arbeiter- und Angestelltenhaushalte Ehepaar/Lebenspartner mit 2 Kindern			2-Personen-Rentnerhaushalte ohne Arbeitseinkom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DM 1)	Prozent			DM 1)	Prozent		

Ausgaben für den privaten Verbrauch

1989	1 803	 		77,8	961	 		87,8
1990	X	 		X	X	 		X
1991	2 550	 		80,8	1 600	 		84,8
1992	2 994	17,4	17,4	75,0	1 988	24,3	24,3	82,4
1990 1. Hj.	1 858	X	X	70,0	1 090	X	X	83,3
2. Hj.	2 407	29,5	X	87,8	1 325	21,6	X	84,8
1991 1. Hj.	2 272	-5,6	22,3	80,6	1 491	12,5	36,8	86,7
2. Hj.	2 828	24,5	17,5	81,1	1 708	14,6	28,9	83,2
1992 1. Hj.	2 718	-3,9	19,6	75,2	1 855	8,6	24,4	80,2
2. Hj.	3 271	20,4	15,7	74,9	2 122	14,4	24,2	84,4
1990 3. Vj.	2 401	34,2	X	95,7	1 283	15,7	X	83,7
4. Vj.	2 412	0,5	X	81,0	1 368	6,6	X	85,8
1991 1. Vj.	2 188	-9,3	13,6	80,4	1 323	-3,3	23,4	78,4
2. Vj.	2 356	7,7	31,7	80,7	1 660	25,5	49,7	94,7
3. Vj.	2 742	16,4	14,2	84,7	1 688	1,7	31,6	83,1
4. Vj.	2 914	6,3	20,8	77,9	1 729	2,4	26,4	83,2
1992 1. Vj.	2 463	-15,5	12,6	69,5	1 717	-0,7	29,8	73,8
2. Vj.	2 972	20,7	26,1	80,7	1 993	16,1	20,1	86,6
3. Vj.	3 198	7,6	16,6	75,8	2 044	2,6	21,1	82,4
4. Vj.	3 344	4,6	14,8	74,0	2 201	7,7	27,3	86,4

Nahrungsmittel, Getränke, Tabakwaren

1989	711	 		30,7	469	 		42,8
1990	X	 		X	X	 		X
1991	752	 		23,8	504	 		26,7
1992	838	11,5	11,5	21,0	557	10,5	10,5	23,1
1990 1. Hj.	715	X	X	26,9	490	X	X	37,5
2. Hj.	724	1,3	X	26,4	490	0,0	X	31,3
1991 1. Hj.	718	-0,8	0,4	25,5	476	-2,9	-2,9	27,7
2. Hj.	786	9,5	8,6	22,5	532	11,8	8,6	25,9
1992 1. Hj.	807	2,7	12,4	22,3	531	-0,2	11,6	23,0
2. Hj.	870	7,7	10,7	19,9	583	9,9	9,7	23,2
1990 3. Vj.	695	-7,9	X	27,7	472	-10,6	X	30,8
4. Vj.	753	8,3	X	25,3	508	7,6	X	31,8
1991 1. Vj.	695	-7,7	2,9	25,6	467	-8,1	3,3	27,7
2. Vj.	741	6,6	-1,8	25,4	486	4,1	-8,0	27,7
3. Vj.	751	1,3	8,1	23,2	509	4,7	7,8	25,1
4. Vj.	820	9,2	8,9	21,9	554	8,8	9,1	26,7
1992 1. Vj.	764	-6,8	9,9	21,6	502	-9,4	7,5	21,6
2. Vj.	850	11,3	14,7	23,1	559	11,4	15,0	24,3
3. Vj.	847	-0,4	12,8	20,1	565	1,1	11,0	22,8
4. Vj.	893	5,5	8,9	19,8	602	6,4	8,5	23,6

*)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1) Angaben bis 1. Halbjahr 1990 in Mark der DDR, ab 2. Halbjahr 1990 in DM.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8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Arbeiter- und Angestelltenhaushalte Ehepaar/Lebenspartner mit 2 Kindern				2-Personen-Rentnerhaushalte ohne Arbeitseinkom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DM 1)	Prozent		DM 1)	Prozent			

Bekleidung, Schuhe

1989	247	 	 	10,7	87	 	 	7,9
1990	X	 	 	X	X	 	 	X
1991	240	 	 	7,6	108	 	 	5,7
1992	251	4,6	4,6	6,3	126	16,2	16,2	5,2
1990 1. Hj.	236	X	X	8,9	107	X	X	8,2
2. Hj.	245	3,8	X	8,9	101	-5,6	X	6,5
1991 1. Hj.	220	-10,2	-6,8	7,8	106	5,0	-0,9	6,2
2. Hj.	259	17,7	5,7	7,4	111	4,7	9,9	5,4
1992 1. Hj.	229	-11,6	4,1	6,3	116	4,5	9,4	5,0
2. Hj.	272	18,7	5,1	6,2	136	17,1	22,3	5,4
1990 3. Vj.	211	-7,6	X	7,8	76	-32,5	X	5,0
4. Vj.	278	31,8	X	9,5	127	67,1	X	8,0
1991 1. Vj.	202	-27,3	-17,3	6,2	97	-23,6	-4,3	5,7
2. Vj.	239	18,3	4,4	8,2	115	18,6	2,6	6,6
3. Vj.	211	-11,7	0,0	6,5	98	-14,8	28,9	4,8
4. Vj.	307	45,5	10,4	8,2	123	25,5	-3,1	5,9
1992 1. Vj.	222	-27,7	9,9	6,3	110	-10,6	13,4	4,7
2. Vj.	237	6,8	-0,8	6,4	121	10,0	5,2	5,3
3. Vj.	225	-5,1	6,6	5,3	113	-6,6	15,3	4,6
4. Vj.	319	41,8	4,0	7,1	159	40,8	28,5	6,2

Wohnungsmiete 2) einschließlich Energie (ohne Kraftstoffe)

1989	100	 	 	4,3	74	 	 	6,8
1990	X	 	 	X	X	 	 	X
1991	207	 	 	6,6	165	 	 	8,7
1992	373	80,4	80,4	9,4	312 b)	88,5	88,5	12,9 b)
1990 1. Hj.	101	X	X	3,8	74	X	X	5,7
2. Hj.	104	3,0	X	3,8	84	13,5	X	5,4
1991 1. Hj.	139	33,7	37,6	4,9	120	42,9	62,2	7,0
2. Hj.	275	97,8	164,4	7,9	211	75,8	151,2	10,3
1992 1. Hj.	355 a)	29,1	155,4	9,8 a)	306	45,0	155,0	13,2
2. Hj.	392	10,2	42,4	9,0	317	3,4	50,3	12,6
1990 3. Vj.	97	-7,1	X	3,9	80	3,2	X	5,2
4. Vj.	111	14,4	X	3,7	88	10,0	X	5,5
1991 1. Vj.	123	10,8	25,6	4,5	101	14,8	44,3	6,0
2. Vj.	155	26,0	48,8	5,3	138	36,6	79,2	7,9
3. Vj.	193	24,5	99,0	6,0	156	13,0	95,0	7,7
4. Vj.	357	85,0	221,6	9,5	266	70,5	202,3	12,8
1992 1. Vj.	343	-3,9	178,9	9,7	299	12,4	196,0	12,9
2. Vj.	368	7,3	137,4	10,0	313	4,7	126,8	13,6
3. Vj.	397	7,9	105,7	9,4	320	2,2	105,1	12,9
4. Vj.	386	-2,6	8,2	8,6	314	-2,1	18,0	12,3

*)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 1) Angaben bis 1. Halbjahr 1990 in Mark der DDR, ab 2. Halbjahr 1990 in DM.

2) Ohne unterstellte Miete bei Haushalten mit Wohneigentum.

a) Die Wohnungsmiete privater Mieterhaushalte beträgt im Vergleich dazu 434 DM. Das sind 11,8 % der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von Mieterhaushalten.

b) Die Wohnungsmiete privater Mieterhaushalte beträgt im Vergleich dazu 366 DM. Das sind 14,9 % der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von Mieterhaushalt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89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Arbeiter- und Angestelltenhaushalte Ehepaar/Lebenspartner mit 2 Kindern				2-Personen-Rentnerhaushalte ohne Arbeitseinkom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DM 1)	Prozent		DM 1)	Prozent			

Möbel, Haushaltsgeräte u. a. Geräte für die Haushaltsführung

1989	247	 		10,7	124	 		11,3	
1990	X	 		X	X	 		X	
1991	317	 		10,1	263	 		13,9	
1992	461	45,4	45,4	11,6	356	35,6	35,6	14,8	
1990	1. Hj.	276	X	X	10,4	117	X	X	8,9
	2. Hj.	288	4,3	X	10,5	201	71,8	X	12,9
1991	1. Hj.	267	-7,3	-3,3	9,5	220	9,5	88,0	12,8
	2. Hj.	367	37,5	27,4	10,5	306	39,1	52,2	14,9
1992	1. Hj.	368	0,3	37,8	10,2	308	0,7	40,0	13,3
	2. Hj.	554	50,4	50,8	12,7	405	31,2	32,3	16,1
1990	3. Vj.	254	9,8	X	10,1	193	61,1	X	12,6
	4. Vj.	322	26,8	X	10,8	209	8,3	X	13,1
1991	1. Vj.	275	-14,6	-11,8	10,1	188	-10,0	64,8	11,1
	2. Vj.	259	-5,8	8,1	8,9	251	33,5	110,1	14,3
	3. Vj.	365	40,9	43,7	11,3	309	23,1	60,1	15,2
	4. Vj.	369	1,1	14,6	9,9	303	-1,9	45,0	14,6
1992	1. Vj.	341	-7,6	24,0	9,6	302	-0,3	60,6	13,0
	2. Vj.	396	16,1	52,9	10,7	314	4,0	25,1	13,6
	3. Vj.	478	20,7	31,0	11,3	345	9,9	11,7	13,9
	4. Vj.	631	32,0	70,7	14,0	464	34,8	53,3	18,2

Güter für Verkehr und Nachrichtenübermittlung

1989	231	 		10,0	65	 		5,9	
1990	X	 		X	X	 		X	
1991	611	 		19,4	278	 		14,7	
1992	538	-12,0	-12,0	13,5	272	-2,1	-2,1	11,3	
1990	1. Hj.	244	X	X	9,2	94	X	X	7,2
	2. Hj.	630	158,2	X	23,0	219	133,0	X	14,0
1991	1. Hj.	598	-5,1	145,1	21,2	312	42,5	231,9	18,1
	2. Hj.	624	4,3	-1,0	17,9	244	-21,8	11,4	11,9
1992	1. Hj.	534	-14,4	-10,7	14,8	252	3,3	-19,2	10,9
	2. Hj.	542	1,5	-13,2	12,4	292	16,0	19,9	11,6
1990	3. Vj.	745	231,8	X	29,7	231	116,5	X	15,1
	4. Vj.	514	-31,0	X	17,3	208	-10,0	X	13,0
1991	1. Vj.	588	14,4	123,0	21,6	255	22,6	216,5	15,1
	2. Vj.	609	3,6	171,1	20,9	369	44,7	246,5	21,0
	3. Vj.	718	17,9	-3,6	22,2	316	-14,4	36,8	15,6
	4. Vj.	530	-26,2	3,1	14,2	171	-45,9	-17,8	8,2
1992	1. Vj.	410	-22,6	-30,3	11,6	211	23,4	-17,3	9,1
	2. Vj.	657	60,2	7,9	17,8	292	38,4	-20,9	12,7
	3. Vj.	603	-8,2	-16,0	14,3	290	-0,7	-8,2	11,7
	4. Vj.	480	-20,4	-9,4	10,6	294	1,6	72,4	11,6

*) I.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1) Angaben bis 1. Halbjahr 1990 in Mark der DDR, ab 2. Halbjahr 1990 in DM.

Nummer 90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Arbeiter- und Angestelltenhaushalte Ehepaar/Lebenspartner mit 2 Kindern				2-Personen-Rentnerhaushalte ohne Arbeitseinkom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DM 1)	Prozent		DM 1)	Prozent			

Güter für die Gesundheits- und Körperpflege

1989	51	 	 	2,2	39	 	 	3,6
1990	X	 	 	X	X	 	 	X
1991	73	 	 	2,3	85	 	 	4,5
1992	94	28,6	28,6	2,4	106	25,2	25,2	4,4
1990 1. Hj.	46	X	X	1,7	40	X	X	3,1
2. Hj.	62	34,8	X	2,3	60	50,0	X	3,8
1991 1. Hj.	67	8,1	45,7	2,4	77	28,3	92,5	4,5
2. Hj.	80	19,4	29,0	2,3	94	22,1	56,7	4,6
1992 1. Hj.	87	8,8	29,9	2,4	99	5,3	28,6	4,3
2. Hj.	102	16,5	27,5	2,3	114	15,8	22,2	4,5
1990 3. Vj.	56	21,3	X	2,2	56	28,6	X	3,7
4. Vj.	67	19,6	X	2,3	63	12,5	X	3,9
1991 1. Vj.	64	-4,5	42,1	2,4	70	11,1	89,0	4,1
2. Vj.	70	9,4	51,4	2,4	83	18,6	91,7	4,7
3. Vj.	70	0,0	25,0	2,2	82	-1,2	46,4	4,0
4. Vj.	89	27,1	32,8	2,4	105	28,0	66,7	5,1
1992 1. Vj.	85	-4,5	32,8	2,4	95	-9,5	35,7	4,1
2. Vj.	90	5,9	28,6	2,4	102	7,4	22,9	4,4
3. Vj.	88	-2,2	25,7	2,1	114	11,8	39,0	4,6
4. Vj.	115	29,9	29,0	2,5	114	-0,1	9,1	4,5

Güter für Bildung, Unterhaltung und Freizeit

1989	160	 	 	6,9	72	 	 	6,6
1990	X	 	 	X	X	 	 	X
1991	258	 	 	8,2	125	 	 	6,6
1992	289	11,9	11,9	7,2	147	17,5	17,5	6,1
1990 1. Hj.	148	X	X	5,6	110	X	X	8,4
2. Hj.	289	95,3	X	10,5	113	2,7	X	7,2
1991 1. Hj.	213	-26,3	43,9	7,6	116	2,7	5,5	6,7
2. Hj.	304	42,7	5,2	8,7	135	16,4	19,5	6,6
1992 1. Hj.	230	-24,3	8,0	6,4	139	3,0	19,8	6,0
2. Hj.	348	51,3	14,6	8,0	156	12,5	15,3	6,2
1990 3. Vj.	256	73,2	X	10,2	104	12,2	X	6,8
4. Vj.	322	25,8	X	10,8	123	18,3	X	7,7
1991 1. Vj.	211	-34,5	43,2	7,8	110	-10,6	-14,3	6,5
2. Vj.	214	1,4	45,0	7,3	121	10,0	30,9	6,9
3. Vj.	243	13,6	-5,1	7,5	118	-2,5	13,5	5,8
4. Vj.	364	49,8	13,0	9,7	152	28,8	23,6	7,3
1992 1. Vj.	225	-38,2	6,6	6,3	140	-7,9	27,3	6,0
2. Vj.	235	4,4	9,8	6,4	137	-2,1	13,2	6,0
3. Vj.	292	24,3	20,2	6,9	134	-2,2	13,6	5,4
4. Vj.	404	38,5	11,0	8,9	178	32,8	17,0	7,0

*)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1) Angaben bis 1. Halbjahr 1990 in Mark der DDR, ab 2. Halbjahr 1990 in DM.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91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1 Statistik des Haushaltsbudgets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
5.1.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Arbeiter- und Angestelltenhaushalte Ehepaar/Lebenspartner mit 2 Kindern				2-Personen-Rentnerhaushalte ohne Arbeitseinkom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Vorberichts- zeitraum	Vorjahres- zeitraum	
	DM 1)	Prozent		DM 1)	Prozent			

**Güter für persönliche Ausstattung, Dienstleistungen des Beherbergungswesens
sowie Güter sonstiger Art**

1989	56	 	 	2,4	31	 	 	2,8
1990	X	 	 	X	X	 	 	X
1991	92	 	 	2,9	71	 	 	3,8
1992	149	63,0	63,0	3,7	112	56,8	56,8	4,6
1990 1. Hj.	92	X	X	3,5	59	X	X	4,5
2. Hj.	66	-28,3	X	2,4	57	-3,4	X	3,6
1991 1. Hj.	50	-24,2	-45,7	1,8	66	15,8	11,9	3,8
2. Hj.	134	168,0	103,0	3,8	77	16,7	35,1	3,7
1992 1. Hj.	106	-20,9	112,0	2,9	104	35,1	57,6	4,5
2. Hj.	193	80,9	43,9	4,4	119	14,4	54,7	4,8
1990 3. Vj.	87	103,6	X	3,5	72	150,4	X	4,7
4. Vj.	45	-48,3	X	1,5	43	-40,3	X	2,7
1991 1. Vj.	30	-33,3	-78,4	1,1	36	-16,3	-59,7	2,1
2. Vj.	69	130,0	61,3	2,4	95	163,9	231,4	5,4
3. Vj.	189	173,9	117,2	5,8	100	5,3	38,9	4,9
4. Vj.	78	-58,7	73,3	2,1	55	-45,0	27,9	2,6
1992 1. Vj.	72	-7,7	140,0	2,0	56	1,8	55,6	2,4
2. Vj.	141	95,8	104,3	3,8	153	173,2	61,1	6,6
3. Vj.	269	90,8	42,3	6,4	163	6,5	63,0	6,6
4. Vj.	116	-56,9	48,5	2,6	76	-53,5	38,7	3,0

Übrige Ausgaben (ohne Ausgaben für Vermögensbildung und Kreditrückzahlung)

1989	219	 	 	9,4	109	 	 	10,0
1990	X	 	 	X	X	 	 	X
1991	228	 	 	7,2	149	 	 	7,9
1992	309	35,4	35,4	7,8	198	33,3	33,3	8,2
1990 1. Hj.	236	X	X	8,9	143	X	X	10,9
2. Hj.	157	-33,5	X	5,7	117	-18,2	X	7,5
1991 1. Hj.	247	57,3	4,7	8,8	138	17,9	-3,5	8,0
2. Hj.	210	-15,0	33,8	6,0	159	15,2	35,9	7,7
1992 1. Hj.	307	46,2	24,3	8,5	196	23,3	42,0	8,5
2. Hj.	312	1,8	48,9	7,1	200	1,7	25,3	8,0
1990 3. Vj.	146	-46,0	X	5,8	94	-34,6	X	6,1
4. Vj.	168	15,1	X	5,6	141	50,0	X	8,8
1991 1. Vj.	242	44,0	20,0	8,9	135	-4,3	-5,0	8,0
2. Vj.	252	4,1	-6,7	8,6	141	4,4	-2,3	8,0
3. Vj.	210	-16,7	43,8	6,5	153	8,5	62,8	7,5
4. Vj.	209	-0,5	24,4	5,6	166	8,5	17,7	8,0
1992 1. Vj.	367	75,6	51,7	10,4	213	28,3	57,8	9,2
2. Vj.	246	-33,0	-2,4	6,7	180	-15,5	27,7	7,8
3. Vj.	248	0,8	18,1	5,9	168	-6,7	9,8	6,8
4. Vj.	376	51,7	80,1	8,3	231	37,1	39,5	9,1

*)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1) Ausgaben bis 1. Halbjahr 1990 in Mark der DDR, ab 2. Halbjahr 1990 in DM.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92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1 Ausgabefähige Einkommen und Einnahmen sowie Veränderungen
der Vermögens- und Finanzkont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absolut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1)	absolut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1)	
	DM	Prozent		DM	Prozen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Ausgabefähige Einkommen und Einnahmen

1991	3 110	X		4 905	X		63,4
1992	3 616	16,3		5 143	4,9		70,3
1991 1. Hj.	2 820	X		4 744	X		59,4
2. Hj.	3 389	20,2		5 072	6,9		66,8
1992 1. Hj.	3 390	0,1		4 821	-5,0		70,3
2. Hj.	3 866	14,0		5 479	13,7		70,6
1991 1. Vj.	2 719	X		4 533	X		60,0
2. Vj.	2 910	7,0		4 959	9,4		58,7
3. Vj.	3 137	7,8		4 694	-5,3		66,8
4. Vj.	3 653	16,4		5 453	16,2		67,0
1992 1. Vj.	3 327	-8,9		4 700	-13,8		70,8
2. Vj.	3 444	3,5		4 937	5,0		69,8
3. Vj.	3 731	8,3		5 085	3,0		73,4
4. Vj.	4 019	7,7		5 872	15,5		68,4

Veränderung der Vermögens- und Finanzkonten

1991	+ 344		11,1	+ 631		12,9	54,5
1992	+ 420		11,6	+ 639		12,4	65,7
1991 1. Hj.	+ 92		3,3	+ 562		11,8	16,4
2. Hj.	+ 587		17,3	+ 702		13,8	83,5
1992 1. Hj.	+ 256		7,6	+ 443		9,2	57,9
2. Hj.	+ 602		15,6	+ 844		15,4	71,3
1991 1. Vj.	+ 144		5,3	+ 489		10,8	29,5
2. Vj.	+ 45		1,5	+ 635		12,8	7,1
3. Vj.	+ 528		16,8	+ 428		9,1	123,5
4. Vj.	+ 648		17,7	+ 979		18,0	66,2
1992 1. Vj.	+ 348		10,4	+ 352		7,5	98,8
2. Vj.	+ 178		5,2	+ 530		10,7	33,6
3. Vj.	+ 654		17,5	+ 567		11,2	115,4
4. Vj.	+ 542		13,5	+ 1 120		19,1	48,4

*) Aus Laufenden Wirtschaft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ei Kindern; ein Ehepartner ist Angestell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liegt die monatliche Bruttoeinkommensgre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M; im frü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350 und 4 900 DM - 1992 zwischen 3 500 und 5 150 DM.

1) Wird als Sparquote bezeichnet.

Nummer 93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DM	Prozent		DM	Prozen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Ausgaben für den privaten Verbrauch

1991		2 569	X	82,6	3 773	X	76,9	68,1
1992		2 965	15,4	82,0	3 976	5,4	77,3	74,6
1991	1. Hj.	2 506	X	88,8	3 648	X	76,9	68,7
	2. Hj.	2 630	5,0	77,6	3 903	7,0	77,0	67,4
1992	1. Hj.	2 880	9,5	84,9	3 851	-1,3	79,9	74,8
	2. Hj.	3 061	6,3	79,2	4 106	6,6	75,0	74,5
1991	1. Vj.	2 373	X	87,3	3 467	X	76,5	68,5
	2. Vj.	2 624	10,6	90,2	3 833	10,6	77,3	68,5
	3. Vj.	2 435	-7,2	77,6	3 801	-0,8	81,0	64,1
	4. Vj.	2 835	16,4	77,6	4 006	5,4	73,5	70,8
1992	1. Vj.	2 684	-5,4	80,7	3 774	-5,8	80,3	71,1
	2. Vj.	3 047	13,6	88,5	3 925	4,0	79,5	77,6
	3. Vj.	2 875	-5,7	77,0	4 015	2,3	79,0	71,6
	4. Vj.	3 271	13,8	81,4	4 198	4,6	71,5	77,9

Nahrungsmittel, Getränke, Tabakwaren

1991		724	X	23,3	881	X	18,0	82,2
1992		781	7,9	21,6	893	1,4	17,4	87,5
1991	1. Hj.	699	X	24,8	845	X	17,8	82,7
	2. Hj.	747	6,9	22,1	917	8,5	18,1	81,5
1992	1. Hj.	764	2,2	22,5	870	-5,2	18,0	87,8
	2. Hj.	799	4,7	20,7	916	5,3	16,7	87,3
1991	1. Vj.	670	X	24,6	801	X	17,7	83,7
	2. Vj.	725	8,2	24,9	891	11,2	18,0	81,4
	3. Vj.	731	0,8	23,3	936	5,0	19,9	78,1
	4. Vj.	764	4,6	20,9	899	-3,9	16,5	85,0
1992	1. Vj.	724	-5,3	21,7	816	-9,3	17,4	88,7
	2. Vj.	798	10,3	23,2	922	13,1	18,7	86,5
	3. Vj.	794	-0,5	21,3	926	0,4	18,2	85,8
	4. Vj.	805	1,4	20,0	906	-2,1	15,4	88,8

*) Aus Laufenden Wirtschaft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ei Kindern; ein Ehepartner ist Angestell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liegt die monatliche Bruttoeinkommensgre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M, im frü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350 und 4 900 DM - 1992 zwischen 3 500 und 5 150 DM.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94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DM	Prozent		DM	Prozent		

Bekleidung, Schuhe

1991	255	X	8,2	302	X	6,2	84,2
1992	241	-5,5	6,7	307	1,6	6,0	78,3
1991 1. Hj.	244	X	8,6	282	X	6,0	86,2
2. Hj.	265	9,0	7,8	323	14,4	6,4	82,1
1992 1. Hj.	232	-12,6	6,8	288	-10,8	6,0	80,5
2. Hj.	250	7,8	6,5	327	13,5	6,0	76,5
1991 1. Vj.	234	X	8,6	282	X	6,2	82,9
2. Vj.	252	8,0	8,7	283	0,3	5,7	89,2
3. Vj.	230	-8,7	7,3	273	-3,5	5,8	84,4
4. Vj.	302	31,1	8,3	374	36,9	6,9	80,9
1992 1. Vj.	221	-26,8	6,6	277	-25,9	5,9	79,9
2. Vj.	241	9,2	7,0	299	8,2	6,1	80,7
3. Vj.	219	-9,3	5,9	275	-7,9	5,4	79,5
4. Vj.	285	30,3	7,1	379	37,4	6,4	75,4

Wohnungsmiete 1) einschließlich Energie (ohne Kraftstoffe)

1991	228	X	7,3	994	X	20,3	23,0
1992	425	86,0	11,7	1 040	4,6	20,2	40,8
1991 1. Hj.	162	X	5,7	998	X	21,0	16,2
2. Hj.	292	80,6	8,6	991	-0,7	19,5	29,5
1992 1. Hj.	409	39,7	12,1	1 030	4,0	21,4	39,7
2. Hj.	442	8,3	11,4	1 050	2,0	19,2	42,1
1991 1. Vj.	140	X	5,2	996	X	22,0	14,1
2. Vj.	181	29,4	6,2	999	0,3	20,2	18,1
3. Vj.	198	9,1	6,3	1 007	0,7	21,4	19,7
4. Vj.	392	98,1	10,7	975	-3,2	17,9	40,2
1992 1. Vj.	403	2,8	12,1	1 031	5,8	21,9	39,1
2. Vj.	413	2,6	12,0	1 029	-0,2	20,8	40,2
3. Vj.	448	8,3	12,0	1 066	3,6	21,0	42,0
4. Vj.	436	-2,6	10,9	1 035	-2,9	17,6	42,2

*) Aus Laufenden Wirtschaft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ei Kindern; ein Ehepartner ist Angestell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liegt die monatliche Bruttoeinkommensgre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M; im frü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350 und 4 900 DM - 1992 zwischen 3 500 und 5 150 DM.

1) Einschließlich Mietwert der Eigentümerwohnung.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95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DM	Prozent		DM	Prozent		

Möbel, Haushaltsgeräte u.a. Güter für die Haushaltsführung

1991	279	X	9,0	285	X	5,8	97,9
1992	299	7,3	8,3	299	5,0	5,8	100,1
1991 1. Hj.	246	X	8,7	271	X	5,7	90,8
2. Hj.	310	25,8	9,1	299	10,1	5,9	103,8
1992 1. Hj.	299	-3,6	8,8	278	-6,9	5,8	107,5
2. Hj.	300	0,3	7,7	321	15,4	5,8	93,5
1991 1. Vj.	255	X	9,4	301	X	6,6	84,7
2. Vj.	239	-6,3	8,2	241	-19,9	4,9	99,0
3. Vj.	287	20,4	9,2	236	-2,1	5,0	121,8
4. Vj.	334	16,1	9,1	362	53,2	6,6	92,2
1992 1. Vj.	279	-16,3	8,4	306	-15,4	6,5	91,3
2. Vj.	315	12,9	9,2	251	-18,0	5,1	125,7
3. Vj.	243	-23,0	6,5	275	9,8	5,4	88,2
4. Vj.	364	49,9	9,1	366	32,8	6,2	99,5

Güter für Verkehr und Nachrichtenübermittlung

1991	633	X	20,3	653	X	13,3	96,9
1992	702	11,0	19,4	713	9,1	13,9	98,5
1991 1. Hj.	768	X	27,2	682	X	14,4	112,6
2. Hj.	502	-34,7	14,8	623	-8,7	12,3	80,6
1992 1. Hj.	733	46,0	21,6	748	20,2	15,5	97,9
2. Hj.	668	-8,8	17,3	676	-9,7	12,3	98,9
1991 1. Vj.	725	X	26,7	556	X	12,3	130,4
2. Vj.	807	11,3	27,7	811	45,9	16,3	99,5
3. Vj.	519	-35,7	16,5	596	-26,5	12,7	87,1
4. Vj.	484	-6,6	13,3	650	9,1	11,9	74,5
1992 1. Vj.	645	33,1	19,4	768	18,1	16,3	84,0
2. Vj.	808	25,3	23,5	730	-4,9	14,8	110,7
3. Vj.	598	-25,9	16,0	668	-8,4	13,1	89,5
4. Vj.	748	25,0	18,6	683	2,2	11,6	109,5

*) Aus Laufenden Wirtschaft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ei Kindern; ein Ehepartner ist Angestell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liegt die monatliche Bruttoeinkommensgre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M; im frü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350 und 4 900 DM - 1992 zwischen 3 500 und 5 150 DM.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96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DM	Prozent		DM	Prozent		

Güter für die Gesundheits- und Körperpflege

1991		80	X	2,6	142	X	2,9	56,4
1992		104	30,2	2,9	156	10,4	3,0	66,5
1991	1. Hj.	74	X	2,6	134	X	2,8	54,7
	2. Hj.	86	16,6	2,5	149	10,8	2,9	57,6
1992	1. Hj.	99	15,0	2,9	150	0,5	3,1	65,9
	2. Hj.	110	11,1	2,8	163	8,9	3,0	67,2
1991	1. Vj.	66	X	2,4	135	X	3,0	48,8
	2. Vj.	80	22,1	2,8	134	-0,7	2,7	60,1
	3. Vj.	73	-8,7	2,3	146	8,9	3,1	50,4
	4. Vj.	99	34,4	2,7	152	4,3	2,8	65,0
1992	1. Vj.	101	2,1	3,0	152	0,3	3,2	66,2
	2. Vj.	97	-4,0	2,8	147	-3,5	3,0	65,8
	3. Vj.	93	-3,5	2,5	151	2,4	3,0	62,0
	4. Vj.	128	37,1	3,2	176	16,6	3,0	72,9

Güter für Bildung, Unterhaltung und Freizeit

1991		308	X	9,9	388	X	7,9	79,3
1992		332	7,8	9,2	425	9,6	8,3	78,0
1991	1. Hj.	269	X	9,5	337	X	7,1	79,6
	2. Hj.	345	28,4	10,2	441	30,6	8,7	78,3
1992	1. Hj.	292	-15,5	8,6	380	-13,9	7,9	76,8
	2. Hj.	376	29,1	9,7	473	24,5	8,6	79,6
1991	1. Vj.	250	X	9,2	324	X	7,1	77,3
	2. Vj.	285	14,0	9,8	352	8,6	7,1	81,2
	3. Vj.	282	-1,3	9,0	365	3,9	7,8	77,1
	4. Vj.	412	46,2	11,3	517	41,6	9,5	79,6
1992	1. Vj.	276	-32,9	8,3	363	-29,7	7,7	76,0
	2. Vj.	305	10,4	8,8	396	8,8	8,0	77,1
	3. Vj.	318	4,2	8,5	386	-2,5	7,6	82,3
	4. Vj.	443	39,5	11,0	559	45,0	9,5	79,2

*) Aus Laufenden Wirtschaft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ei Kindern; ein Ehepartner ist Angestell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liegt die monatliche Bruttoeinkommensgre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M; im frü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 350 und 4 900 DM - 1992 zwischen 3 500 und 5 150 DM.

Nummer 97

5 Monatliche Geldeinnahmen und -ausgaben je ausgewählter privater Haushalt
5.2 Vier-Personen-Haushalte von Angestellten und Arbeitern mit mittleren Einkommen *)
5.2.2 Geldausgaben nach Ausgabenarten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iveau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Ausgab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berichtszeitraum	Anteil an den ausgabefähigen Einkommen und Einnahmen	
	DM	Prozent		DM	Prozent		Früheres Bundesgebiet = 100

Güter für persönliche Ausstattung, Dienstleistungen des Beherbergungswesens sowie Güter sonstiger Art

1991	64	X	2,0	129	X	2,6	49,5
1992	83	29,7	2,3	143	11,6	2,8	57,6
1991 1. Hj.	44	X	1,6	97	X	2,1	45,5
2. Hj.	82	86,0	2,4	161	65,3	3,2	51,1
1992 1. Hj.	54	-34,8	1,6	107	-33,5	2,2	50,1
2. Hj.	115	113,8	3,0	181	69,1	3,3	63,4
1991 1. Vj.	34	X	1,2	73	X	1,6	46,2
2. Vj.	54	60,9	1,9	123	68,9	2,5	44,0
3. Vj.	114	112,4	3,6	243	98,4	5,2	47,1
4. Vj.	49	-57,6	1,3	78	-67,9	1,4	62,2
1992 1. Vj.	35	-27,7	1,1	61	-21,3	1,3	57,2
2. Vj.	70	98,1	2,0	151	146,0	3,1	46,0
3. Vj.	162	132,2	4,3	268	77,1	5,3	60,3
4. Vj.	62	-61,7	1,5	95	-64,6	1,6	65,4

Übrige Ausgaben (ohne Ausgaben für Vermögensbildung und Kreditrückzahlung)

1991	197	X	6,3	501	X	10,2	39,3
1992	230	17,0	6,4	528	5,3	10,3	43,6
1991 1. Hj.	223	X	7,9	534	X	11,3	41,7
2. Hj.	172	-22,8	5,1	467	-12,6	9,2	36,8
1992 1. Hj.	254	48,0	7,5	527	12,9	10,9	48,3
2. Hj.	203	-20,0	5,3	529	0,3	9,6	38,5
1991 1. Vj.	202	X	7,4	576	X	12,7	35,0
2. Vj.	241	19,5	8,3	491	-14,9	9,9	49,2
3. Vj.	174	-27,9	5,5	466	-5,1	9,9	37,3
4. Vj.	170	-2,4	4,6	467	0,3	8,6	36,3
1992 1. Vj.	296	74,5	8,9	574	22,8	12,2	51,6
2. Vj.	219	-26,2	6,3	482	-16,1	9,8	45,4
3. Vj.	202	-7,5	5,4	503	4,4	9,9	40,2
4. Vj.	205	1,3	5,1	555	10,3	9,4	36,9

*) Aus Laufenden Wirtschaftsrechnungen (1. Halbjahr 1991 ohne Berlin-Ost). Ehepaare mit zwei Kindern; ein Ehepartner ist Angestellte(r) oder Arbeiter(i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liegt die monatliche Bruttocommensgrenze 1991 zwischen 2 300 und 3 800 DM - 1992 zwischen 2 400 und 3 900 DM; im früheren Bundesgebiet 1991 zwischen 3350 und 4 900 DM - 1992 zwischen 3 500 und 5 150 DM.

Nummer 98

6 Investitionen

6.1 Investition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Gegenstand der Nachweisung	Bruttoanlageinvestition			
	1991	1992	1993	1991 bis 1993
	Milliarden DM			
	jeweilige Preise			
Insgesamt	87,2 ^{a)}	115,6 ^{a)}	138 ^{b)}	375 ^{c)}
Ausrüstungen	41,8 ^{a)}	47,2 ^{a)}	51 ^{b)}	153 ^{c)}
Bauten	45,3 ^{a)}	68,4 ^{a)}	87 ^{b)}	222 ^{c)}
Unternehmen insgesamt ¹⁾	70,5	93,8	113,2	277
Land- und Forstwirtschaft	1,5	1,5	2,0	5
Produzierendes Gewerbe	28,4	36,9	46,4	112
Handel	4,5	5,2	6,5	16
Verkehr, Nachrichtenübermittlung	15,7	22,0	24,0	62
Dienstleistungsunternehmen	20,4	28,2	34,3	83
darunter: ohne Wohnungsvermietung ..	7,9	10,2	10,8	29
Staat, Organisationen ohne Erwerbszweck	14,0	19,0	22,0	55
	Investitionen von Unternehmen aus dem früheren Bundesgebiet ²⁾			
Verarbeitendes Gewerbe	8,0	15,0	16,5 ^{d)}	40
Baugewerbe	1,2	1,8	2,1 ^{d)}	5
Handel	2,8	4,0	4,5 ^{d)}	11
Dienstleistungsunternehmen (ohne Wohnungsvermietung)	2,6	3,2	3,8 ^{d)}	10
	Investitionen je Einwohner ³⁾ Niveau des früheren Bundesgebiets — 100			
Insgesamt	62	80	97	
Nichtöffentliche Investitionen	59	75	53	
Unternehmen (ohne Wohnungsvermietung)	66	84	104	
Öffentliche Investitionen	92	120	130	

1) Sektorale Angaben durch Ifo-Institut München. — Quelle: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2) Ifo-Institut München. Auslandsaktivitäten über westdeutsche Töchter mit enthalten.

3) Berechnungen und Vorausschätzung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a) Ergebnisse der Volkswirtschaftlichen Gesamtrechnungen des Statistischen Bundesamtes.

b) Vorausschätzung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c) Einschließlich 2. Halbjahr 1990.

d) Investitionspläne des Unternehmen.

Nummer 99

6 Investitionen

6.2 Investitionsförderung im Rahme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und des Europäischen Regionalfonds

6.2.1 Neue Länder und Berlin-Ost

Zeitraum	Bewilligung			Inanspruchnahme von Fördermitteln	Sicherung	Neuschaffung
	Investitionsvorhaben	Zugrunde liegendes Investitionsvolumen	Fördermittel		von Arbeitsplätzen	
	Anzahl	Millionen DM			Anzahl	

Insgesamt

1991 1)	5 772	42 906	10 729	4 597	
1992	7 049	39 728	9 031	6 299	
1992 1. Hj.	2 899	19 874	4 453	1 370	
2. Hj.	4 150	19 854	4 578	4 929	
1993 1. Hj.	4 006	13 336	3 393	1 917	
1993 Jan	240	1 299	303	75	
Feb	802	2 451	707	290	
Mrz	371	1 130	272	237	
Apr	743	3 079	709	456	
Mai	641	1 273	386	327	
Jun	1 209	4 105	1 015	531	
Jul	659	7 176	1 449	647	

Gewerbliche Wirtschaft

1991 1)	4 754	37 920	7 523	3 143	151 701	170 999
1992	6 236	35 397	6 380	4 272	87 745	165 857
1992 1. Hj.	2 603	18 321	3 527	999	39 753	71 250
2. Hj.	3 633	17 075	2 853	3 273	47 992	94 607
1993 1. Hj.	3 685	11 819	2 350	1 358	44 634	71 510
1993 Jan	225	1 200	237	61	7 185	5 101
Feb	742	1 949	418	196	5 780	14 977
Mrz	343	1 048	206	161	3 406	7 496
Apr	704	2 915	583	361	9 524	14 794
Mai	554	1 047	220	207	5 489	6 188
Jun	1 117	3 661	686	372	13 250	22 954
Jul	519	6 584	977	494	10 215	6 744

Wirtschaftsnahe Infrastruktur

1991 1)	1 018	4 986	3 206	1 454	
1992	813	4 332	2 651	2 027	
1992 1. Hj.	296	1 553	926	371	
2. Hj.	517	2 779	1 725	1 656	
1993 1. Hj.	321	1 517	1 043	559	
1993 Jan	15	99	66	14	
Feb	60	502	289	94	
Mrz	28	82	66	76	
Apr	39	164	126	95	
Mai	87	226	166	120	
Jun	92	444	330	159	
Jul	140	592	472	153	

1) Enthält Angaben seit Einführung der Förderung, das heißt seit Oktober 1990.

Quelle: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Nummer 100

6 Investitionen
6.2 Investitionsförderung im Rahmen de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und des Europäischen Regionalfonds
6.2.2 Gewerbliche Wirtschaft und Wirtschaftsnaher Infrastruktur nach Ländern
Millionen DM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Gewerbliche Wirtschaft						
Bewilligung						
Zugrunde liegendes Investitionsvolumen						
1991 I)	5 796	2 423	12 763	8 715	6 539	1 684
1992	8 283	3 784	11 448	6 306	4 381	1 194
1993 1.Hj.	2 944	882	2 787	1 398	2 783	1 025
Fördermittel						
1991 I)	1 252	515	2 534	1 589	1 282	351
1992	1 643	553	1 687	1 303	973	221
1993 1. Hj.	607	166	446	299	609	224
In Anspruch genommene Fördermittel						
1991 I)	605	225	1 134	537	513	129
1992	859	371	1 319	784	785	154
1993 1. Hj.	303	123	184	305	390	53
Sicherung und Neuschaffung von Arbeitsplätzen (Anzahl)						
1991 I)	52 067	32 787	90 218	69 719	49 282	28 627
1992	18 561	27 829	103 797	41 745	42 048	19 622
1993 1. Hj.	19 261	11 151	32 681	11 303	29 361	12 387
Wirtschaftsnaher Infrastruktur						
Bewilligung						
Zugrunde liegendes Investitionsvolumen						
1991 I)	752	881	1 051	1 093	1 156	53
1992	438	702	1 407	930	634	221
1993 1.Hj.	588	83	483	103	187	73
Fördermittel						
1991 I)	589	483	769	795	529	41
1992	292	427	806	564	369	193
1993 1.Hj.	379	65	375	56	108	60
In Anspruch genommene Fördermittel						
1991 I)	219	328	283	370	236	18
1992	283	397	613	378	275	81
1993 1.Hj.	97	40	180	121	111	10

1) Enthält Angaben seit Einführung der Förderung, das heißt seit Oktober 1990.

Quelle: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Nummer 101

7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r Warenverkehr
7.1 Außenhandelsumsätze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Deutschland = 100	
	Einfuhr	Ausfuhr	Einfuhr	Ausfuhr	Einfuhr	Ausfuhr	Einfuhr	Ausfuhr

Milliarden DM
Insgesamt

1989	41,1	41,1	506,5	641,0	547,6	682,1	7,5	6,0
1990	22,9	38,1	550,6	642,8	573,5	680,9	4,0	5,6
1991	10,9	17,5	633,1	648,4	643,9	665,8	1,7	2,6
1992	9,6	13,8	628,0	657,4	637,5	671,2	1,5	2,1

Mittel- und osteuropäische Länder 1)

1989	26,1	29,0	19,2	24,5	45,4	53,5	57,5	54,2
1990	14,9	29,8	21,8	23,5	36,6	53,3	40,7	55,9
1991	6,1	11,4	26,4	26,0	32,6	37,4	18,7	30,5
1992	4,6	7,2	30,4	30,1	35,0	37,3	13,1	19,3

Prozent

Anteile der mittel- und osteuropäischen Länder (Insgesamt = 100)

1989	63,5	70,5	3,8	3,8	8,3	7,8		
1990	65,0	78,3	4,0	3,6	6,4	7,8		
1991	56,4	65,5	4,2	4,0	5,1	5,6		
1992	48,1	52,1	4,8	4,6	5,5	5,6		

Veränderung gegenüber 1989
Insgesamt

1990	-44,5	-7,4	8,7	0,3	4,7	-0,2		
1991	-73,6	-57,5	25,0	1,1	17,6	-2,4		
1992	-76,7	-66,4	24,0	2,6	16,4	-1,6		

Mittel- und osteuropäische Länder 1)

1990	-43,2	2,9	13,2	-4,3	-19,3	-0,4		
1991	-76,6	-60,6	37,4	6,1	-28,2	-30,0		
1992	-82,3	-75,2	57,9	22,9	-22,9	-30,2		

1) Albanien, Bulgarien, Tschechoslowakei, Polen, Rumänien, ehemalige UdSSR und Ungarn.

Nummer 102

7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r Warenverkehr
7.2 Außenhandelsumsätze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nach Teilen des
Internationalen Warenverzeichnisses für den Außenhandel (SITC - Rev. 3)

Nr. der Systematik	Warenbenennung	Einfuhr				Ausfuhr			
		1989	1990	1991	1992	1989	1990	1991	1992
Millionen DM									
0	Nahrungsmittel und lebende Tiere	2 902	1 307	407	547	1 147	1 285	1 598	1 097
1	Getränke und Tabak	821	324	87	129	514	55	54	59
2	Rohstoffe (ausgenommen Nahrungsmittel und mineralische Brennstoffe)	2 388	1 426	519	556	606	599	421	400
3	Mineralische Brennstoffe, Schmiermittel usw.	8 214	5 552	4 204	2 677	2 082	831	281	129
4	Tierische und pflanzliche Öle, Fette und Wachse	46	28	8	3	15	17	7	5
5	Chemische Erzeugnisse, andere nicht genannte	2 504	1 351	606	581	4 659	3 966	2 528	2 341
6	Bearbeitete Waren vorwiegend nach Beschaffenheit	6 678	3 906	1 561	1 827	6 772	5 010	2 389	2 312
7	Maschinenbau- und elektrotechnische Erzeugnisse, Fahrzeuge	13 956	6 647	2 656	2 540	19 885	20 241	8 466	6 450
8	Verschiedene Fertigwaren	2 303	1 492	700	738	5 051	5 558	1 549	938
9	Waren, Warenverkehrsvorgänge, andere nicht erfaßte	1 330	818	113	2	374	511	158	62
	Insgesamt	41 142	22 852	10 860	9 596	41 105	38 072	17 450	13 793

Prozent									
Insgesamt = 100									
0	Nahrungsmittel und lebende Tiere	7,1	5,7	3,7	5,7	2,8	3,4	9,2	8,0
1	Getränke und Tabak	2,0	1,4	0,8	1,3	1,2	0,1	0,3	0,4
2	Rohstoffe (ausgenommen Nahrungsmittel und mineralische Brennstoffe)	5,8	6,2	4,8	5,8	1,5	1,6	2,4	2,9
3	Mineralische Brennstoffe, Schmiermittel usw.	20,0	24,3	38,7	27,9	5,1	2,2	1,6	0,9
4	Tierische und pflanzliche Öle, Fette und Wachse	0,1	0,1	0,1	0,0	0,0	0,0	0,0	0,0
5	Chemische Erzeugnisse, andere nicht genannte	6,1	5,9	5,6	6,1	11,3	10,4	14,5	17,0
6	Bearbeitete Waren vorwiegend nach Beschaffenheit	16,2	17,1	14,4	19,0	16,5	13,2	13,7	16,8
7	Maschinenbau- und elektrotechnische Erzeugnisse, Fahrzeuge	33,9	29,1	24,5	26,5	48,4	53,2	48,5	46,8
8	Verschiedene Fertigwaren	5,6	6,5	6,4	7,7	12,3	14,6	8,9	6,8
9	Waren, Warenverkehrsvorgänge, andere nicht erfaßte	3,2	3,6	1,0	0,0	0,9	1,3	0,9	0,4
	Insgesamt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03

7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r Warenverkehr
7.3 Außenhandelsumsätze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nach Ländergruppen

Ländergruppe	Einfuhr				Ausfuhr			
	1989	1990	1991	1992	1989	1990	1991	1992
Millionen DM								
Industrialisierte westliche Länder	9 256	5 660	3 935	4 501	6 914	5 105	4 454	4 650
EG-Länder	4 195	2 678	2 339	2 476	3 508	2 931	2 978	3 167
Entwicklungsländer	2 300	1 273	691	427	2 688	2 115	1 396	1 789
Mittel- und osteuropäische Länder 1)	26 142	14 854	6 122	4 616	28 975	29 811	11 423	7 185
ehemalige UdSSR	15 052	9 107	4 254	2 881	16 576	17 761	9 049	5 542
Asiatische Staatshandelsländer	802	550	112	52	859	675	176	168
Insgesamt 2)	41 142	22 852	10 860	9 596	41 105	38 072	17 450	13 793
Prozent								
Insgesamt = 100								
Industrialisierte westliche Länder	22,5	24,8	36,2	46,9	16,8	13,4	25,5	33,7
EG-Länder	10,2	11,7	21,5	25,8	8,5	7,7	17,1	23,0
Entwicklungsländer	5,6	5,6	6,4	4,5	6,5	5,6	8,0	13,0
Mittel- und osteuropäische Länder 1)	63,5	65,0	56,4	48,1	70,5	78,3	65,5	52,1
ehemalige UdSSR	36,6	39,9	39,2	30,0	40,3	46,6	51,9	40,2
Asiatische Staatshandelsländer	2,0	2,4	1,0	0,5	2,1	1,8	1,0	1,2
Insgesamt 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Albanien, Bulgarien, Tschechoslowakei, Polen, Rumänien, ehemalige UdSSR und Ungarn.

2) Einschließlich Polargebiete, Schiffs- und Luftfahrzeugbedarf und Nichtermittelte Länder und Gebiete.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04

7 Außenhandel und innerdeutscher Warenverkehr
7.4 Warenverkehr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Zeitraum	Außenhandel		innerdeutscher Warenverkehr		Salden	
	Einfuhr	Ausfuhr	Bezüge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aus dem früheren Bundesgebiet	Lieferungen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in das frühere Bundesgebiet	Außenhandel	innerdeutscher Warenverkehr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Millionen DM

1989	41 142	41 105	8 104	7 205	-37	-898
1990	22 852	38 072	21 326	8 274	15 221	-13 052
1991	10 860	17 450	46 733	8 985	6 590	-37 748
1992	9 596	13 793	63 385	10 228	4 197	-53 157
1990 4. Vj.	3 007	9 977	7 352	2 361	6 971	-4 990
1991 1. Vj.	3 110	4 937	8 368	2 274	1 827	-6 094
2. Vj.	2 476	3 235	11 596	2 129	759	-9 468
3. Vj.	2 913	4 072	12 475	2 248	1 159	-10 226
4. Vj.	2 361	5 206	14 293	2 334	2 845	-11 959
1992 1. Vj.	2 050	3 760	13 467	2 434	1 709	-11 033
2. Vj.	2 323	3 306	15 532	2 618	983	-12 914
3. Vj.	2 471	3 200	16 070	2 711	729	-13 359
4. Vj.	2 751	3 527	18 317	2 465	776	-15 852
1993 1. Vj.	14 764	2 501	...	-12 263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1990	-44,5	-7,4	163,2	14,8		
1991	-52,5	-54,2	119,1	8,6		
1992	-11,4	-22,5	35,6	13,8		
1990 4. Vj.	-71,4	-4,4	188,9	24,3		
1991 1. Vj.	-59,3	-41,5	312,3	28,9		
2. Vj.	-73,0	-68,8	99,2	-1,6		
3. Vj.	-3,9	-56,1	103,7	13,2		
4. Vj.	-21,5	-47,8	94,4	-1,2		
1992 1. Vj.	-34,1	-23,8	60,9	7,0		
2. Vj.	-6,2	2,2	33,9	23,0		
3. Vj.	-15,2	-21,4	28,8	20,6		
4. Vj.	16,5	-32,3	28,2	5,6		
1993 1. Vj.	9,6	2,8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05

8 Produzierendes Gewerbe
8.1 Index der Nettoproduktion *)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2. Halbjahr 1990	1985	2. Halbjahr 1990	Veränderung gegenüber					
	= 100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D	.	117,7	.	X					
1991 D	77,3	121,0	99,1	X					
1992 D	78,9	119,4	98,3	X					
1990 4. Vj.	97,3	125,4	103,3	-5,1	8,9	6,7	.	5,2	.
1991 1. Vj.	79,1	119,3	98,4	-18,7	-4,9	-4,7	.	4,2	.
2. Vj.	73,6	122,3	99,8	-7,0	2,5	1,4	.	5,8	.
3. Vj.	76,3	117,6	96,3	3,7	-3,8	-3,5	-25,6	2,2	-0,5
4. Vj.	80,0	125,0	102,0	4,8	6,3	5,9	-17,8	-0,3	-1,3
1992 1. Vj.	74,8	121,6	99,9	-6,5	-2,7	-2,0	-5,4	1,9	1,5
2. Vj.	76,3	120,7	99,2	2,1	-0,7	-0,8	3,7	-1,3	-0,6
3. Vj.	80,4	116,2	95,8	5,3	-3,7	-3,4	5,4	-1,2	-0,5
4. Vj.	84,1	119,0	98,2	4,6	2,4	2,5	5,1	-4,8	-3,7
1993 1. Vj.	75,4	109,6	90,9	-10,3	-7,9	-7,4	0,8	-9,9	-9,0
2. Vj.	82,8	111,0	92,4	9,8	1,3	1,7	8,5	-8,0	-6,9
1990 Okt	101,3	132,5	108,9	1,3	7,3	6,2	.	6,3	.
Nov	101,5	126,8	104,6	0,2	-4,3	-3,9	.	5,3	.
Dez	89,2	117,0	96,3	-12,1	-7,7	-7,9	.	4,0	.
1991 Jan	84,2	116,2	96,6	-5,6	-0,7	0,3	.	5,9	.
Feb	72,6	114,6	94,1	-13,8	-1,4	-2,6	.	4,0	.
Mrz	80,5	127,0	104,4	10,9	10,8	10,9	.	2,8	.
Apr	72,5	123,3	100,6	-9,9	-2,9	-3,6	.	8,3	.
Mai	74,8	118,2	96,8	3,2	-4,1	-3,8	.	1,6	.
Jun	73,6	125,3	102,1	-1,6	6,0	5,5	.	7,5	.
Jul	75,5	118,0	96,5	2,6	-5,8	-5,5	-29,9	4,3	0,2
Aug	74,5	109,4	89,8	-1,3	-7,3	-6,9	-25,4	0,6	-1,9
Sep	78,8	125,5	102,5	5,8	14,7	14,1	-21,2	1,6	0,0
Okt	81,3	133,2	108,0	3,2	6,1	5,4	-19,7	0,5	-0,8
Nov	82,4	127,7	104,3	1,4	-4,1	-3,4	-18,8	0,7	-0,3
Dez	76,3	114,1	93,6	-7,4	-10,6	-10,3	-14,5	-2,5	-2,8
1992 Jan	72,5	116,4	95,6	-5,0	2,0	2,1	-13,9	0,2	-1,0
Feb	70,5	119,0	97,6	-2,8	2,2	2,1	-2,9	3,8	3,7
Mrz	81,3	129,4	106,6	15,3	8,7	9,2	1,0	1,9	2,1
Apr	77,3	122,3	100,6	-4,9	-5,5	-5,6	6,6	-0,8	0,0
Mai	74,4	118,6	97,4	-3,8	-3,0	-3,2	-0,5	0,3	0,6
Jun	77,3	121,2	99,5	3,9	2,2	2,2	5,0	-3,3	-2,5
Jul	77,0	115,6	94,9	-0,4	-4,6	-4,6	2,0	-2,0	-1,7
Aug	78,0	107,9	89,4	1,3	-6,7	-5,8	4,7	-1,4	-0,4
Sep	86,2	125,1	103,0	10,5	15,9	15,2	9,4	-0,3	0,5
Okt	87,4	128,5	105,7	1,4	2,7	2,6	7,5	-3,5	-2,1
Nov	86,0	120,8	99,6	-1,6	-6,0	-5,8	4,4	-5,4	-4,5
Dez	78,8	107,8	89,2	-8,4	-10,8	-10,4	3,3	-5,5	-4,7
1993 Jan	73,4	104,4	86,7	-6,9	-3,2	-2,8	1,2	-10,3	-9,3
Feb	71,2	104,9	86,9	-3,0	0,5	0,2	1,0	-11,8	-11,0
Mrz	81,5	119,5	99,2	14,5	13,9	14,2	0,2	-7,7	-6,9
Apr	81,2	111,3	92,7	-0,4	-6,9	-6,6	5,0	-9,0	-7,9
Mai	79,9	108,9	90,4	-1,6	-2,2	-2,5	7,4	-8,2	-7,2
Jun	87,4	112,9	94,0	9,4	3,7	4,0	13,1	-6,8	-5,5

*) Fachliche Unternehmensteile; arbeitstäglich bereinigt.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07

8 Produzierendes Gewerbe

8.3 Betriebe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Zeitraum	Produzierendes Gewerbe insgesamt	Elektrizität, Gas-, Fernwärme und Wasserversorgung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insgesamt	Baugewerbe		
				Insgesamt	Bauhauptgewerbe	Ausbau-gewerbe

Zahl der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D	10 455	370	7 112	2 973	1 990	983
1992 D	10 874	442	6 375	4 057	2 778	1 280
1991 Jan	9 925	312	7 087	2 526	1 682	844
Feb	10 334	354	7 331	2 649	1 780	869
Mrz	10 456	360	7 345	2 751	1 850	901
Apr	10 500	373	7 357	2 770	1 855	915
Mai	10 496	367	7 334	2 795	1 863	932
Jun	10 515	360	7 260	2 895	1 924	971
Jul	10 395	387	7 073	2 935	1 943	992
Aug	10 340	386	7 001	2 953	1 952	1 001
Sep	10 350	388	6 973	2 989	1 982	1 007
Okt	10 734	388	6 906	3 440	2 327	1 113
Nov	10 700	388	6 832	3 480	2 355	1 125
Dez	10 718	380	6 846	3 492	2 362	1 130
1992 Jan	10 512	408	6 529	3 575	2 414	1 161
Feb	10 464	410	6 384	3 670	2 489	1 181
Mrz	10 524	420	6 391	3 713	2 520	1 193
Apr	10 505	428	6 347	3 730	2 527	1 203
Mai	10 553	430	6 317	3 806	2 594	1 212
Jun	10 610	441	6 333	3 836	2 625	1 211
Jul	10 624	446	6 324	3 854	2 640	1 214
Aug	10 691	462	6 359	3 870	2 647	1 223
Sep	10 705	463	6 357	3 885	2 662	1 223
Okt	11 677	462	6 388	4 827	3 351	1 476
Nov	11 787	465	6 392	4 930	3 424	1 506
Dez	11 834	468	6 375	4 991	3 437	1 554
1993 Jan	11 693	517	6 073	5 103	3 492	1 611
Feb	11 819	555	6 107	5 157	3 528	1 629
Mrz	11 905	559	6 154	5 192	3 542	1 650
Apr	12 093	570	6 259	5 264	3 572	1 692
Mai	12 174	581	6 290	5 303	3 603	1 700
Jun	...	584	...	5 333	3 633	1 700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Jahresdurchschnitt 1991

1992 Mrz	0,7	13,4	-10,1	24,9	26,6	21,4
Jun	1,5	19,1	-11,0	29,0	31,9	23,2
Sep	2,4	25,1	-10,6	30,7	33,8	24,4
Dez	13,2	26,4	-10,4	67,9	72,7	58,1
1993 Jan	11,8	39,6	-14,6	71,6	75,5	63,9
Feb	13,0	49,9	-14,1	73,5	77,3	65,7
Mrz	13,9	51,0	-13,5	74,6	78,0	67,9
Apr	15,7	54,0	-12,0	77,1	79,5	72,1
Mai	16,4	56,9	-11,6	78,4	81,1	72,9
Jun	...	57,7	...	79,4	82,6	72,9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08

8 Produzierendes Gewerbe

8.3 Betriebe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Zeitraum	Verarbeitendes Gewerbe				
	Insgesamt	Grundstoff- und Produktions- gütergewerbe	Investitionsgüter produzierendes Gewerbe	Verbrauchsgüter produzierendes Gewerbe	Nahrungs- und Genußmittel produzierendes Gewerbe

Zahl der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D	7 069	1 140	2 738	2 072	1 120
1992 D	6 335	1 051	2 671	1 673	940
1991 Jan	7 045	1 143	2 693	2 111	1 098
Feb	7 285	1 152	2 797	2 171	1 165
Mrz	7 301	1 162	2 799	2 190	1 150
Apr	7 312	1 188	2 804	2 164	1 156
Mai	7 289	1 181	2 799	2 158	1 150
Jun	7 217	1 169	2 780	2 123	1 145
Jul	7 031	1 131	2 701	2 065	1 134
Aug	6 959	1 133	2 690	2 021	1 115
Sep	6 933	1 113	2 707	2 013	1 100
Okt	6 867	1 099	2 698	1 984	1 086
Nov	6 790	1 096	2 682	1 938	1 074
Dez	6 804	1 107	2 710	1 919	1 068
1992 Jan	6 488	1 052	2 655	1 759	1 022
Feb	6 346	1 020	2 612	1 710	1 004
Mrz	6 351	1 028	2 622	1 706	995
Apr	6 307	1 038	2 608	1 683	978
Mai	6 277	1 036	2 615	1 674	952
Jun	6 293	1 049	2 627	1 678	939
Jul	6 284	1 055	2 652	1 661	916
Aug	6 319	1 059	2 692	1 661	907
Sep	6 317	1 059	2 704	1 651	903
Okt	6 348	1 069	2 748	1 637	894
Nov	6 352	1 077	2 755	1 634	886
Dez	6 335	1 074	2 756	1 623	882
1993 Jan	6 045	1 000	2 694	1 507	844
Feb	6 079	1 009	2 705	1 517	848
Mrz	6 126	1 025	2 731	1 518	852
Apr	6 228	1 057	2 771	1 545	855
Mai	6 259	1 061	2 792	1 552	854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Jahresdurchschnitt 1991

1992 Mrz	-10,2	-9,8	-4,2	-17,7	-11,2
Jun	-11,0	-8,0	-4,1	-19,0	-16,2
Sep	-10,6	-7,1	-1,2	-20,3	-19,4
Dez	-10,4	-5,8	0,7	-21,7	-21,3
1993 Jan	-14,5	-12,3	-1,6	-27,3	-24,6
Feb	-14,0	-11,5	-1,2	-26,8	-24,3
Mrz	-13,3	-10,1	-0,3	-26,7	-23,9
Apr	-11,9	-7,3	1,2	-25,4	-23,7
Mai	-11,5	-6,9	2,0	-25,1	-23,8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11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1 Index des Auftragseingangs *)
9.1.3 Grundstoff- und Produktionsgütergewerbe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2.Halbjahr 1990	1985	2.Halbjahr 1990	Veränderung gegenüber					
	- 100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D	.	111,0	.	X			.	0,6	.
1991 D	66,6	110,6	98,3	X			.	-0,4	.
1992 D	56,1	108,9	96,0	X			-15,8	-1,5	-2,3
1990 4. Vj.	80,9	110,6	99,4	-32,1	1,8	-1,2	.	3,0	.
1991 1. Vj.	73,7	114,7	102,3	-8,9	3,7	2,9	.	0,4	.
2. Vj.	62,8	112,9	99,9	-14,8	-1,6	-2,3	.	2,3	.
3. Vj.	60,8	108,2	95,8	-3,2	-4,2	-4,1	-49,0	-0,4	-4,8
4. Vj.	68,9	106,6	95,1	13,3	-1,5	-0,7	-14,8	-3,6	-4,3
1992 1. Vj.	63,5	117,0	103,4	-7,8	9,8	8,8	-13,8	2,0	1,1
2. Vj.	52,4	112,4	98,7	-17,5	-4,0	-4,6	-16,6	-0,5	-1,2
3. Vj.	55,2	105,7	93,3	5,4	-5,9	-5,4	-9,2	-2,3	-2,6
4. Vj.	53,2	100,5	88,7	-3,7	-4,9	-4,9	-22,8	-5,7	-6,7
1993 1. Vj.	58,0	102,4	90,7	9,1	1,9	2,2	-8,7	-12,5	-12,3
2. Vj.	60,6	103,0	91,4	4,5	0,6	0,8	15,6	-8,3	-7,4
1990 Okt	88,2	121,3	108,9	1,5	7,7	7,3	.	5,0	.
Nov	80,2	113,4	101,7	-9,1	-6,5	-6,6	.	3,4	.
Dez	74,4	97,1	87,5	-7,2	-14,4	-14,0	.	0,2	.
1991 Jan	77,0	119,4	106,5	3,5	23,0	21,7	.	6,0	.
Feb	69,8	111,1	98,9	-9,4	-7,0	-7,1	.	2,7	.
Mrz	74,3	113,7	101,5	6,4	2,3	2,6	.	-6,6	.
Apr	69,0	117,2	104,0	-7,1	3,1	2,5	.	7,8	.
Mai	59,4	109,0	96,3	-13,9	-7,0	-7,4	.	-3,9	.
Jun	60,0	112,6	99,4	1,0	3,3	3,2	.	3,1	.
Jul	64,3	113,2	100,3	7,2	0,5	0,9	-58,2	5,4	-2,0
Aug	52,7	102,7	90,5	-18,0	-9,3	-9,8	-54,7	-3,0	-7,7
Sep	65,4	108,7	96,5	24,1	5,8	6,6	-24,7	-3,5	-4,9
Okt	72,3	116,8	103,9	10,6	7,5	7,7	-18,0	-3,7	-4,6
Nov	62,3	108,3	96,0	-13,8	-7,3	-7,6	-22,3	-4,5	-5,6
Dez	72,2	94,7	85,3	15,9	-12,6	-11,1	-3,0	-2,5	-2,5
1992 Jan	63,4	116,4	102,9	-12,2	22,9	20,6	-17,7	-2,5	-3,4
Feb	63,1	113,7	100,6	-0,5	-2,3	-2,2	-9,6	2,3	1,7
Mrz	64,1	121,0	106,8	1,6	6,4	6,2	-13,7	6,4	5,2
Apr	52,7	112,8	99,0	-17,8	-6,8	-7,3	-23,6	-3,8	-4,8
Mai	49,1	109,4	95,9	-6,8	-3,0	-3,1	-17,3	0,4	-0,4
Jun	55,4	114,9	101,1	12,8	5,0	5,4	-7,7	2,0	1,7
Jul	53,1	110,6	97,3	-4,2	-3,7	-3,8	-17,4	-2,3	-3,0
Aug	50,9	97,6	86,1	-4,1	-11,8	-11,5	-3,4	-5,0	-4,9
Sep	61,7	109,0	96,5	21,2	11,7	12,1	-5,7	0,3	0,0
Okt	55,9	108,1	95,3	-9,4	-0,8	-1,2	-22,7	-7,4	-8,3
Nov	53,4	101,5	89,6	-4,5	-6,1	-6,0	-14,3	-6,3	-6,7
Dez	50,2	92,0	81,3	-6,0	-9,4	-9,3	-30,5	-2,9	-4,7
1993 Jan	53,0	96,5	85,4	5,6	4,9	5,0	-16,4	-17,1	-17,0
Feb	54,2	98,8	87,3	2,3	2,4	2,2	-14,1	-13,1	-13,2
Mrz	66,8	111,9	99,3	23,2	13,3	13,7	4,2	-7,5	-7,0
Apr	61,2	102,2	90,8	-8,4	-8,7	-8,6	16,1	-9,4	-8,3
Mai	53,9	98,6	87,2	-11,9	-3,5	-4,0	9,8	-9,9	-9,1
Jun	66,8	108,2	96,2	23,9	9,7	10,3	20,6	-5,8	-4,8

*) Wertindex (in jeweiligen Preisen).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12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1 Index des Auftragseingangs *)
 9.1.4 Investitionsgüter produzierendes Gewerbe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2. Halbjahr 1990	1985	2. Halbjahr 1990	Veränderung gegenüber					
	- 100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D		137,9		X			.	7,1	.
1991 D	93,6	141,3	100,2	X			.	2,5	.
1992 D	88,6	136,7	96,9	X			-5,3	-3,3	-3,3
1990 4. Vj.	99,9	143,5	101,9	-0,2	4,1	3,9	.	5,7	.
1991 1. Vj.	92,0	144,8	102,5	-7,9	0,9	0,6	.	5,5	.
2. Vj.	88,7	139,2	98,6	-3,6	-3,9	-3,8	.	4,8	.
3. Vj.	94,8	138,7	98,4	6,9	-0,4	-0,2	-5,3	0,7	0,3
4. Vj.	98,7	142,5	101,2	4,1	2,7	2,8	-1,2	-0,7	-0,7
1992 1. Vj.	89,2	151,6	107,1	-9,7	6,4	5,8	-3,0	4,7	4,5
2. Vj.	87,8	135,5	96,0	-1,6	-10,6	-10,3	-1,0	-2,7	-2,6
3. Vj.	75,1	131,6	92,8	-14,4	-2,9	-3,3	-20,8	-5,1	-5,7
4. Vj.	102,2	128,1	91,5	36,1	-2,7	-1,4	3,5	-10,1	-9,6
1993 1. Vj.	90,5	126,6	90,1	-11,4	-1,2	-1,6	1,5	-16,5	-15,9
2. Vj.	98,3	122,0	87,2	8,6	-3,7	-3,2	12,0	-10,0	-9,2
1990 Okt	83,7	152,1	107,1	2,6	8,4	8,2	.	17,1	.
Nov	100,1	144,0	102,3	19,6	-5,3	-4,5	.	7,5	.
Dez	115,9	134,5	96,4	15,8	-6,6	-5,8	.	-6,3	.
1991 Jan	93,9	148,8	105,3	-19,0	10,6	9,2	.	13,0	.
Feb	66,2	137,9	96,8	-29,5	-7,3	-8,1	.	5,2	.
Mrz	116,0	147,8	105,5	75,2	7,2	9,0	.	-0,8	.
Apr	94,5	141,6	100,4	-18,5	-4,2	-4,8	.	10,2	.
Mai	78,1	133,3	94,1	-17,4	-5,9	-6,3	.	-3,3	.
Jun	93,4	142,7	101,2	19,6	7,1	7,5	.	8,0	.
Jul	82,2	143,3	101,1	-12,0	0,4	-0,1	-34,2	4,3	2,3
Aug	122,3	129,7	93,4	48,8	-9,5	-7,6	30,7	-4,4	-3,1
Sep	80,0	143,0	100,8	-34,6	10,3	7,9	-2,0	1,9	1,8
Okt	80,8	146,5	103,2	1,0	2,4	2,4	-3,5	-3,7	-3,6
Nov	95,7	141,4	100,3	18,4	-3,5	-2,8	-4,4	-1,8	-2,0
Dez	119,7	139,7	100,1	25,1	-1,2	-0,2	3,3	3,9	3,8
1992 Jan	120,3	145,4	104,1	0,5	4,1	4,0	28,1	-2,3	-1,1
Feb	66,9	148,4	103,9	-44,4	2,1	-0,2	1,1	7,6	7,3
Mrz	80,4	161,1	113,2	20,2	8,6	9,0	-30,7	9,0	7,3
Apr	99,1	139,0	98,9	23,3	-13,7	-12,6	4,9	-1,8	-1,5
Mai	69,2	130,7	91,9	-30,2	-6,0	-7,1	-11,4	-2,0	-2,3
Jun	95,0	136,8	97,2	37,3	4,7	5,8	1,7	-4,1	-4,0
Jul	65,8	135,0	94,7	-30,7	-1,3	-2,6	-20,0	-5,8	-6,3
Aug	66,2	117,4	82,7	0,6	-13,0	-12,7	-45,9	-9,5	-11,5
Sep	93,3	142,5	101,0	40,9	21,4	22,1	16,6	-0,3	0,2
Okt	94,2	129,1	91,9	1,0	-9,4	-9,0	16,6	-11,9	-10,9
Nov	82,3	127,3	90,2	-12,6	-1,4	-1,8	-14,0	-10,0	-10,1
Dez	130,1	128,0	92,5	58,1	0,5	2,5	8,7	-8,4	-7,6
1993 Jan	80,8	121,8	86,4	-37,9	-4,8	-6,6	-32,8	-16,2	-17,0
Feb	87,4	122,4	87,0	8,2	0,5	0,7	30,6	-17,5	-16,3
Mrz	103,3	135,7	96,8	18,2	10,9	11,3	28,5	-15,8	-14,5
Apr	95,8	119,6	85,4	-7,3	-11,9	-11,8	-3,3	-14,0	-13,7
Mai	89,7	120,3	85,7	-6,4	0,6	0,4	29,6	-8,0	-6,7
Jun	109,4	126,0	90,4	22,0	4,7	5,5	15,2	-7,9	-7,0

*) Wertindex (in jeweiligen Preisen).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Nummer 115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3 Index des Umsatzes *)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2. Halbjahr 1990	1985	2. Halbjahr 1990	Veränderung gegenüber					
	- 100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D	.	127,1	.	 			.	6,5	.
1991 D	55,1	134,1	99,7	 			.	5,5	.
1992 D	52,0	135,1	100,1	 			-5,6	0,7	0,4
1990 4. Vj.	96,8	135,7	103,9	-6,2	9,3	8,1	.	6,7	.
1991 1. Vj.	51,8	130,5	96,9	-46,5	-3,8	-6,7	.	5,4	.
2. Vj.	52,6	135,5	100,5	1,5	3,8	3,7	.	8,4	.
3. Vj.	54,1	131,5	97,7	2,9	-3,0	-2,8	-47,6	6,0	1,7
4. Vj.	61,8	138,9	103,6	14,2	5,6	6,0	-36,2	2,4	-0,3
1992 1. Vj.	49,4	136,3	100,8	-20,0	-1,9	-2,7	-4,6	4,4	4,0
2. Vj.	49,8	135,7	100,4	0,7	-0,4	-0,4	-5,3	0,1	-0,1
3. Vj.	51,0	132,1	97,9	2,3	-2,7	-2,5	-5,7	0,5	0,2
4. Vj.	57,9	136,2	101,4	13,6	3,1	3,5	-6,3	-1,9	-2,1
1993 1. Vj.	49,0	121,4	90,1	-15,3	-10,9	-11,1	-0,8	-10,9	-10,6
2. Vj.	54,7	122,5	91,4	11,6	0,9	1,4	9,8	-9,7	-9,0
1990 Okt	92,2	140,5	107,0	-2,6	5,6	5,1	.	9,3	.
Nov	96,1	137,9	105,4	4,2	-1,9	-1,5	.	8,8	.
Dez	102,1	128,7	99,3	6,2	-6,7	-5,8	.	1,7	.
1991 Jan	52,6	128,6	95,6	-48,5	-0,1	-3,7	.	8,8	.
Feb	47,9	127,1	94,1	-8,9	-1,2	-1,6	.	8,1	.
Mrz	54,9	135,9	100,9	14,6	6,9	7,2	.	0,2	.
Apr	54,6	138,4	102,7	-0,5	1,8	1,8	.	16,0	.
Mai	49,5	127,2	94,3	-9,3	-8,1	-8,2	.	-2,2	.
Jun	53,7	141,0	104,5	8,5	10,8	10,8	.	12,3	.
Jul	53,4	133,7	99,2	-0,6	-5,2	-5,1	-50,8	10,3	5,1
Aug	52,0	119,3	88,9	-2,6	-10,8	-10,4	-51,0	1,0	-3,5
Sep	56,8	141,4	105,0	9,2	18,5	18,1	-40,0	6,3	3,1
Okt	59,2	143,7	106,8	4,2	1,6	1,7	-35,8	2,3	-0,2
Nov	59,4	141,0	104,9	0,3	-1,9	-1,8	-38,2	2,2	-0,5
Dez	66,7	132,0	99,0	12,3	-6,4	-5,6	-34,7	2,6	-0,3
1992 Jan	45,8	128,5	95,0	-31,3	-2,7	-4,0	-12,9	-0,1	-0,6
Feb	48,2	132,8	98,2	5,2	3,3	3,4	0,6	4,5	4,4
Mrz	54,3	147,5	109,1	12,7	11,1	11,1	-1,1	8,5	8,1
Apr	50,7	137,0	101,4	-6,6	-7,1	-7,1	-7,1	-1,0	-1,3
Mai	47,9	129,8	96,1	-5,5	-5,3	-5,2	-3,2	2,0	1,9
Jun	50,8	140,2	103,7	6,1	8,0	7,9	-5,4	-0,6	-0,8
Jul	47,6	131,9	97,5	-6,3	-5,9	-6,0	-10,9	-1,3	-1,7
Aug	45,3	115,9	86,0	-4,8	-12,1	-11,8	-12,9	-2,8	-3,3
Sep	60,0	148,4	110,2	32,5	28,0	28,1	5,6	5,0	5,0
Okt	54,4	139,3	103,3	-9,3	-6,1	-6,3	-8,1	-3,1	-3,3
Nov	55,5	134,9	100,3	2,0	-3,2	-2,9	-6,6	-4,3	-4,4
Dez	63,8	134,4	100,5	15,0	-0,4	0,2	-4,3	1,8	1,5
1993 Jan	42,9	108,6	80,5	-32,8	-19,2	-19,9	-6,3	-15,5	-15,3
Feb	45,5	116,5	86,4	6,1	7,3	7,3	-5,6	-12,3	-12,0
Mrz	58,7	139,1	103,5	29,0	19,4	19,8	8,1	-5,7	-5,1
Apr	53,2	122,8	91,5	-9,4	-11,7	-11,6	4,9	-10,4	-9,8
Mai	47,7	116,1	86,3	-10,3	-5,5	-5,7	-0,4	-10,6	-10,2
Jun	63,2	128,6	96,3	32,5	10,8	11,6	24,4	-8,3	-7,1

*) Wertindex (in jeweiligen Preisen).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16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4 Umsatz *)

9.4.1 Inlandsumsatz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1)
	Millionen DM			Anteil des Inlandsumsatzes am Gesamtumsatz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1	82 538	1 426 867	1 509 404	85,4	73,2	73,8	.	10,5	.	5,5
1992	80 090	1 432 232	1 512 322	86,1	73,2	73,8	-3,0	0,4	0,2	5,3
1991 1. Vj.	21 620	344 481	366 100	89,8	73,1	73,9	.	13,9	.	5,9
2. Vj.	20 419	360 318	380 737	86,8	73,3	73,9	.	16,3	.	5,4
3. Vj.	19 854	352 836	372 690	84,7	73,8	74,3	.	9,1	.	5,3
4. Vj.	20 645	369 232	389 877	80,7	72,6	73,0	.	3,8	.	5,3
1992 1. Vj.	18 755	356 187	374 942	85,1	72,8	73,3	-13,2	3,4	2,4	5,0
2. Vj.	19 475	358 491	377 966	85,9	73,0	73,6	-4,6	-0,5	-0,7	5,2
3. Vj.	19 747	353 188	372 936	86,0	73,7	74,3	-0,5	0,1	0,1	5,3
4. Vj.	22 113	364 365	386 478	87,4	73,4	74,1	7,1	-1,3	-0,9	5,7
1993 1. Vj.	19 231	324 257	343 489	88,1	73,1	73,8	2,5	-9,0	-8,4	5,6
2. Vj.	21 247	331 110	352 357	87,8	73,1	73,8	9,1	-7,6	-6,8	6,0
1991 Jan	7 406	115 135	122 541	89,1	73,5	74,3	.	18,1	.	6,0
Feb	6 868	110 358	117 226	90,9	72,6	73,5	.	15,0	.	5,9
Mrz	7 346	118 988	126 333	89,6	73,1	73,9	.	9,3	.	5,8
Apr	7 001	122 318	129 319	86,5	72,9	73,5	.	23,5	.	5,4
Mai	6 713	114 216	120 929	88,1	73,6	74,2	.	6,9	.	5,6
Jun	6 705	123 784	130 489	86,0	73,4	73,9	.	19,0	.	5,1
Jul	6 846	120 159	127 006	86,1	74,1	74,6	.	15,0	.	5,4
Aug	6 472	109 180	115 652	84,4	74,5	75,0	.	3,7	.	5,6
Sep	6 536	123 497	130 032	83,7	72,9	73,4	.	8,7	.	5,0
Okt	6 685	128 063	134 747	82,3	73,1	73,5	.	3,8	.	5,0
Nov	6 794	124 478	131 273	82,1	72,7	73,1	.	2,8	.	5,2
Dez	7 166	116 691	123 857	77,9	72,1	72,4	.	4,7	.	5,8
1992 Jan	6 152	114 520	120 672	87,7	73,4	74,0	-16,9	-0,5	-1,5	5,1
Feb	5 881	115 521	121 402	82,8	72,8	73,2	-14,4	4,7	3,6	4,8
Mrz	6 722	126 145	132 867	85,1	72,3	72,9	-8,5	6,0	5,2	5,1
Apr	6 573	120 747	127 321	85,8	72,9	73,5	-6,1	-1,3	-1,5	5,2
Mai	6 275	115 305	121 580	85,8	73,2	73,8	-6,5	1,0	0,5	5,2
Jun	6 627	122 439	129 066	86,0	73,0	73,5	-1,2	-1,1	-1,1	5,1
Jul	6 415	118 570	124 985	87,1	73,7	74,3	-6,3	-1,3	-1,6	5,1
Aug	6 141	106 843	112 985	87,8	74,7	75,3	-5,1	-2,1	-2,3	5,4
Sep	7 191	127 775	134 966	83,7	72,9	73,4	10,0	3,5	3,8	5,3
Okt	7 212	124 238	131 449	89,4	73,4	74,2	7,9	-3,0	-2,4	5,5
Nov	7 055	119 349	126 404	86,7	73,1	73,7	3,8	-4,1	-3,7	5,6
Dez	7 847	120 778	128 625	86,2	73,8	74,4	9,5	3,5	3,8	6,1
1993 Jan	5 806	100 309	106 114	89,2	74,5	75,2	-5,6	-12,4	-12,1	5,5
Feb	6 102	102 522	108 624	88,8	72,4	73,1	3,8	-11,3	-10,5	5,6
Mrz	7 323	121 427	128 750	86,7	72,6	73,3	8,9	-3,7	-3,1	5,7
Apr	7 088	111 270	118 357	90,0	73,4	74,2	7,8	-7,8	-7,0	6,0
Mai	6 461	104 658	111 119	89,0	72,9	73,7	3,0	-9,2	-8,6	5,8
Jun	7 697	115 183	122 881	84,9	72,9	73,5	16,2	-5,9	-4,8	6,3

*) Ohne Umsatz-(Mehrwert-)steuer.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 A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17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4 Umsatz *)

9.4.2 Auslandsumsatz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1)
	Millionen DM			Anteil des Auslandsumsatzes am Gesamtumsatz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1	14 079	522 690	536 768	14,6	26,8	26,2	·	-1,7	·	2,6
1992	12 878	523 391	536 270	13,9	26,8	26,2	-8,5	0,1	-0,1	2,4
1991 1. Vj.	2 453	126 929	129 381	10,2	26,9	26,1	·	-6,3	·	1,9
2. Vj.	3 097	131 367	134 464	13,2	26,7	26,1	·	-2,7	·	2,3
3. Vj.	3 575	125 271	128 847	15,3	26,2	25,7	·	-0,6	·	2,8
4. Vj.	4 954	139 123	144 076	19,4	27,4	27,0	·	2,9	·	3,4
1992 1. Vj.	3 271	133 023	136 294	14,9	27,2	26,7	33,4	4,8	5,3	2,4
2. Vj.	3 210	132 429	135 639	14,1	27,0	26,4	3,6	0,8	0,9	2,4
3. Vj.	3 209	126 081	129 289	14,0	26,3	25,7	-10,3	0,6	0,3	2,5
4. Vj.	3 189	131 858	135 047	12,6	26,6	25,9	-35,6	-5,2	-6,3	2,4
1993 1. Vj.	2 598	119 319	121 918	11,9	26,9	26,2	-20,6	-10,3	-10,5	2,1
2. Vj.	2 959	122 009	124 967	12,2	26,9	26,2	-7,8	-7,9	-7,9	2,4
1991 Jan	907	41 567	42 473	10,9	26,5	25,7	·	-2,4	·	2,1
Feb	689	41 570	42 259	9,1	27,4	26,5	·	-3,6	·	1,6
Mrz	857	43 792	44 649	10,4	26,9	26,1	·	-12,1	·	1,9
Apr	1 096	45 444	46 540	13,5	27,1	26,5	·	4,6	·	2,4
Mai	909	41 048	41 957	11,9	26,4	25,8	·	-12,6	·	2,2
Jun	1 092	44 875	45 967	14,0	26,6	26,1	·	0,6	·	2,4
Jul	1 105	42 080	43 185	13,9	25,9	25,4	·	0,1	·	2,6
Aug	1 195	37 361	38 556	15,6	25,5	25,0	·	-4,4	·	3,1
Sep	1 275	45 830	47 106	16,3	27,1	26,6	·	2,0	·	2,7
Okt	1 441	47 123	48 564	17,7	26,9	26,5	·	0,3	·	3,0
Nov	1 480	46 792	48 272	17,9	27,3	26,9	·	2,7	·	3,1
Dez	2 033	45 208	47 240	22,1	27,9	27,6	·	5,8	·	4,3
1992 Jan	865	41 530	42 395	12,3	26,6	26,0	-4,6	-0,1	-0,2	2,0
Feb	1 224	43 266	44 491	17,2	27,2	26,8	77,7	4,1	5,3	2,8
Mrz	1 182	48 227	49 409	14,9	27,7	27,1	37,9	10,1	10,7	2,4
Apr	1 092	44 844	45 935	14,2	27,1	26,5	-0,4	-1,3	-1,3	2,4
Mai	1 038	42 231	43 268	14,2	26,8	26,2	14,2	2,9	3,1	2,4
Jun	1 080	45 355	46 435	14,0	27,0	26,5	-1,1	1,1	1,0	2,3
Jul	953	42 357	43 310	12,9	26,3	25,7	-13,7	0,7	0,3	2,2
Aug	855	36 209	37 064	12,2	25,3	24,7	-28,4	-3,1	-3,9	2,3
Sep	1 400	47 514	48 914	16,3	27,1	26,6	9,8	3,7	3,8	2,9
Okt	855	44 949	45 804	10,6	26,6	25,8	-40,6	-4,6	-5,7	1,9
Nov	1 081	43 939	45 019	13,3	26,9	26,3	-27,0	-6,1	-6,7	2,4
Dez	1 253	42 971	44 224	13,8	26,2	25,6	-38,4	-4,9	-6,4	2,8
1993 Jan	704	34 290	34 994	10,8	25,5	24,8	-18,7	-17,4	-17,5	2,0
Feb	769	39 148	39 918	11,2	27,6	26,9	-37,2	-9,5	-10,3	1,9
Mrz	1 125	45 881	47 006	13,3	27,4	26,7	-4,8	-4,9	-4,9	2,4
Apr	790	40 277	41 068	10,0	26,6	25,8	-27,6	-10,2	-10,6	1,9
Mai	796	38 889	39 685	11,0	27,1	26,3	-23,3	-7,9	-8,3	2,0
Jun	1 373	42 842	44 215	15,1	27,1	26,5	27,0	-5,5	-4,8	3,1

*) Ohne Umsatz-(Mehrwert-)steuer.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 A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21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7 Umsatz *) nach Ländern
9.7.1 Insgesamt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	-------------	----------------------------	---------	----------------	-----------	------------

Millionen DM

1991	19 019	6 922	28 882	23 287	13 254	5 257	
1992	16 085	7 490	27 911	23 574	12 923	4 974	
1991	Jan	1 838	433	2 488	1 924	1 217	414
	Feb	1 676	432	2 343	1 750	994	361
	Mrz	1 759	562	2 476	1 913	1 072	421
	Apr	1 590	606	2 469	1 982	1 098	353
	Mai	1 579	566	2 288	1 798	1 033	359
	Jun	1 549	520	2 363	1 878	1 058	430
	Jul	1 708	524	2 302	1 944	1 050	424
	Aug	1 602	483	2 240	1 867	1 002	474
	Sep	1 312	507	2 345	1 988	1 201	458
	Okt	1 432	578	2 432	2 013	1 181	489
	Nov	1 486	515	2 495	2 134	1 158	487
	Dez	1 488	1 196	2 643	2 093	1 189	588
1992	Jan	1 365	494	2 135	1 714	935	373
	Feb	1 308	602	2 072	1 829	945	350
	Mrz	1 412	604	2 437	1 930	1 079	442
	Apr	1 357	654	2 225	1 947	1 054	428
	Mai	1 242	621	2 190	1 798	1 015	394
	Jun	1 312	596	2 390	1 937	1 097	375
	Jul	1 233	644	2 217	1 879	1 035	360
	Aug	1 273	568	1 995	1 802	1 000	360
	Sep	1 354	648	2 483	2 492	1 181	432
	Okt	1 385	601	2 473	2 014	1 190	445
	Nov	1 381	692	2 439	2 075	1 152	398
	Dez	1 463	767	2 854	2 158	1 240	617
1993	Jan	1 185	535	1 964	1 591	943	291
	Feb	1 199	520	2 126	1 679	1 030	317
	Mrz	1 392	759	2 603	1 996	1 294	404
	Apr	1 296	796	2 371	1 845	1 202	369
	Mai	1 174	576	2 130	1 822	1 169	387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monat

1992	Jan	-25,7	14,1	-14,2	-10,9	-23,1	-9,8
	Feb	-22,0	39,1	-11,6	4,5	-5,0	-3,2
	Mrz	-19,8	7,4	-1,5	0,9	0,7	5,0
	Apr	-14,6	8,0	-9,9	-1,8	-4,0	21,4
	Mai	-21,3	9,7	-4,3	-0,0	-1,7	9,9
	Jun	-15,3	14,6	1,2	3,1	3,8	-12,8
	Jul	-27,8	22,8	-3,7	-3,4	-1,5	-15,0
	Aug	-20,6	17,7	-10,9	-3,5	-0,2	-24,0
	Sep	3,2	27,8	5,9	25,4	-1,7	-5,5
	Okt	-3,3	4,0	1,7	0,0	0,8	-9,1
	Nov	-7,1	34,3	-2,2	-2,8	-0,6	-18,4
	Dez	-1,7	-35,8	8,0	3,1	4,3	4,9
1993	Jan	-13,2	8,3	-8,0	-7,2	0,8	-21,9
	Feb	-8,3	-13,7	2,6	-8,2	9,0	-9,4
	Mrz	-1,4	25,7	6,8	3,4	19,9	-8,6
	Apr	-4,5	21,6	6,6	-5,2	14,0	-13,8
	Mai	-5,5	-7,2	-2,7	1,4	15,2	-2,0

*) Ohne Umsatz-(Mehrwert-)steuer.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Angaben der Statistischen Landesämte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22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7 Umsatz *) nach Ländern
9.7.2 Auslandsumsatz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	-------------	----------------------------	---------	----------------	-----------	------------

Millionen DM

1991	1 684	1 191	3 614	4 739	2 129	723
1992	1 329	1 286	3 708	4 522	1 528	506
1991 Jan	112	30	229	224	274	37
Feb	100	53	203	178	132	23
Mrz	126	71	235	282	116	28
Apr	123	80	296	447	132	18
Mai	154	48	237	322	131	18
Jun	155	55	265	430	149	39
Jul	129	57	270	429	159	61
Aug	138	52	289	433	190	91
Sep	116	60	316	474	217	93
Okt	170	127	402	468	196	78
Nov	165	82	402	544	190	96
Dez	197	476	470	507	244	138
1992 Jan	112	70	270	246	111	56
Feb	108	196	336	407	112	64
Mrz	113	123	387	366	139	55
Apr	111	149	320	347	117	48
Mai	111	158	314	311	118	25
Jun	129	101	329	332	166	23
Jul	95	100	315	307	108	29
Aug	99	84	194	332	126	19
Sep	114	104	219	802	135	25
Okt	105	55	242	304	116	33
Nov	118	68	325	418	120	32
Dez	114	77	457	350	159	96
1993 Jan	86	26	211	228	118	34
Feb	89	42	309	184	114	31
Mrz	120	128	388	277	153	59
Apr	86	62	285	178	128	50
Mai	70	39	215	298	126	48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monat

1992 Jan	-0,6	133,0	17,9	9,9	-59,3	50,0
Feb	7,9	270,5	65,9	128,2	-14,6	176,6
Mrz	-10,4	73,9	64,9	29,7	19,8	93,3
Apr	-9,8	86,4	8,0	-22,4	-11,3	158,7
Mai	-28,0	230,5	32,8	-3,5	-9,4	41,8
Jun	-16,3	85,2	23,9	-22,7	11,6	-41,2
Jul	-26,3	74,5	16,7	-28,5	-32,3	-52,5
Aug	-28,0	61,6	-32,9	-23,3	-33,9	-78,7
Sep	-1,6	73,9	-30,9	69,4	-37,5	-72,9
Okt	-38,1	-56,4	-39,9	-35,0	-40,9	-57,6
Nov	-28,6	-17,1	-19,2	-23,3	-36,6	-66,8
Dez	-42,1	-83,9	-2,7	-31,0	-35,1	-30,4
1993 Jan	-23,0	-62,5	-22,0	-7,4	6,3	-38,2
Feb	-17,6	-78,9	-8,0	-54,7	1,7	-51,9
Mrz	5,9	4,0	0,3	-24,2	10,6	8,4
Apr	-22,2	-58,3	-11,0	-48,6	9,6	5,2
Mai	-36,6	-75,7	-31,5	-4,1	6,0	89,8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23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7 Umsatz *) nach Ländern
9.7.3 Anteil des Auslandsumsatzes am Gesamtumsatz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Prozent						
1991	8,9	17,2	12,5	20,3	16,1	13,7
1992	8,3	17,2	13,3	19,2	11,8	10,2
1991						
Jan	6,1	7,0	9,2	11,6	22,5	9,0
Feb	6,0	12,3	8,7	10,2	13,2	6,4
Mrz	7,2	12,5	9,5	14,7	10,8	6,7
Apr	7,7	13,2	12,0	22,5	12,0	5,2
Mai	9,7	8,5	10,3	17,9	12,7	5,0
Jun	10,0	10,5	11,2	22,9	14,1	9,2
Jul	7,6	10,9	11,7	22,1	15,2	14,3
Aug	8,6	10,8	12,9	23,2	19,0	19,3
Sep	8,8	11,8	13,5	23,8	18,0	20,3
Okt	11,9	22,0	16,5	23,3	16,6	16,0
Nov	11,1	15,9	16,1	25,5	16,4	19,8
Dez	13,2	39,8	17,8	24,2	20,5	23,5
1992						
Jan	8,2	14,2	12,7	14,3	11,9	14,9
Feb	8,2	32,6	16,2	22,3	11,9	18,4
Mrz	8,0	20,3	15,9	18,9	12,9	12,4
Apr	8,2	22,8	14,4	17,8	11,1	11,1
Mai	8,9	25,5	14,3	17,3	11,7	6,5
Jun	9,9	17,0	13,7	17,1	15,2	6,2
Jul	7,7	15,5	14,2	16,3	10,4	8,0
Aug	7,8	14,8	9,7	18,4	12,6	5,4
Sep	8,4	16,1	8,8	32,2	11,5	5,8
Okt	7,6	9,2	9,8	15,1	9,7	7,5
Nov	8,5	9,8	13,3	20,1	10,5	8,1
Dez	7,8	10,0	16,0	16,2	12,8	15,6
1993						
Jan	7,3	4,9	10,7	14,3	12,6	11,8
Feb	7,4	8,0	14,5	11,0	11,1	9,8
Mrz	8,6	16,8	14,9	13,9	11,9	14,7
Apr	6,7	7,8	12,0	9,7	10,7	13,6
Mai	6,0	6,7	10,1	16,4	10,7	12,5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Nummer 124

9 Bergbau und Verarbeitendes Gewerbe
9.8 Beschäftigte *) nach Ländern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1 000 Personen							
1991 D	266	108	603	355	331	96	
1992 D	159	61	309	208	154	52	
1991	Jan	301	120	690	430	418	118
	Feb	299	125	720	429	401	116
	Mrz	297	128	701	414	394	113
	Apr	295	123	695	405	382	110
	Mai	293	119	678	395	371	109
	Jun	283	114	655	378	354	103
	Jul	257	103	575	337	308	87
	Aug	249	103	554	324	294	84
	Sep	242	99	534	312	282	82
	Okt	233	91	498	292	268	79
	Nov	225	88	478	284	258	77
	Dez	216	80	455	263	244	75
1992	Jan	185	71	357	240	177	60
	Feb	179	69	345	233	173	57
	Mrz	173	67	338	228	170	57
	Apr	170	65	323	218	164	56
	Mai	163	63	318	215	161	54
	Jun	159	61	310	209	156	53
	Jul	153	59	298	197	145	50
	Aug	150	57	294	195	145	49
	Sep	147	57	290	193	143	48
	Okt	144	56	282	191	140	46
	Nov	143	56	279	189	138	47
	Dez	139	54	272	183	135	46
1993	Jan	128	54	252	174	125	41
	Feb	126	55	250	172	125	41
	Mrz	124	55	247	170	125	40
	Apr	124	54	247	170	124	38
	Mai	119	54	245	168	124	38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monat							
1992	Jan	-38,5	-40,3	-48,2	-44,3	-57,7	-49,4
	Feb	-40,0	-44,5	-52,0	-45,6	-56,8	-50,4
	Mrz	-41,6	-47,2	-51,8	-45,1	-56,8	-49,8
	Apr	-42,5	-47,5	-53,5	-46,1	-57,1	-49,6
	Mai	-44,4	-46,8	-53,1	-45,7	-56,5	-50,0
	Jun	-43,9	-46,7	-52,7	-44,9	-55,9	-48,3
	Jul	-40,6	-42,5	-48,2	-41,6	-52,9	-42,2
	Aug	-39,9	-44,2	-46,8	-39,7	-50,8	-40,9
	Sep	-39,0	-42,4	-45,6	-38,2	-49,4	-42,1
	Okt	-38,3	-37,8	-43,4	-34,5	-47,9	-41,2
	Nov	-36,7	-36,8	-41,5	-33,6	-46,5	-38,6
	Dez	-35,4	-32,2	-40,2	-30,3	-44,7	-37,9
1993	Jan	-30,8	-24,2	-29,4	-27,5	-29,0	-30,4
	Feb	-29,7	-20,4	-27,7	-26,1	-27,8	-29,0
	Mrz	-28,3	-18,8	-27,0	-25,3	-26,4	-28,8
	Apr	-27,2	-16,0	-23,7	-22,3	-24,6	-32,0
	Mai	-26,6	-14,3	-23,0	-21,7	-23,4	-30,2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26

10 Baugewerbe
10.1 Index des Auftragseingangs für das Bauhauptgewerbe *)
10.1.2 Wohnungsbau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2. Halbjahr 1990	1985	2. Halbjahr 1990	Veränderung gegenüber					
	= 100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4. Vj.	93,4	149,0	99,5	-12,4	1,1	-1,0	.	21,4	.
1991 1. Vj.	71,6	143,0	92,9	-23,3	-4,0	-6,6	.	4,7	.
2. Vj.	81,8	172,5	111,3	14,2	20,6	19,8	.	15,6	.
3. Vj.	89,6	177,0	115,1	9,5	2,6	3,4	-15,9	20,1	14,5
4. Vj.	90,6	173,2	113,0	1,1	-2,1	-1,8	-3,0	16,2	13,6
1992 1. Vj.	95,2	175,1	114,8	5,0	1,1	1,6	33,0	22,4	23,6
2. Vj.	112,9	197,0	130,0	18,6	12,5	13,2	38,0	14,2	16,8
3. Vj.	115,2	188,0	125,1	2,1	-4,6	-3,7	28,6	6,2	8,7
4. Vj.	144,7	197,0	134,6	25,6	4,8	7,6	59,7	13,7	19,1
1993 1. Vj.	144,0	195,5	133,7	-0,5	-0,8	-0,7	51,3	11,7	16,5
2. Vj.	196,9	232,4	162,6	36,7	18,9	21,6	74,4	18,0	25,1
1990 Okt	70,2	153,6	98,8	-59,4	-2,6	-14,9	.	21,7	.
Nov	104,2	152,4	103,0	48,4	-0,8	4,3	.	33,8	.
Dez	105,8	141,0	96,7	1,5	-7,5	-6,1	.	10,2	.
1991 Jan	68,7	112,4	74,8	-35,1	-20,3	-22,6	.	-2,2	.
Feb	65,3	132,3	85,8	-4,9	17,7	14,7	.	1,7	.
Mrz	80,9	184,3	118,0	23,9	39,3	37,5	.	11,9	.
Apr	73,3	163,7	105,0	-9,4	-11,2	-11,0	.	15,0	.
Mai	69,1	160,6	102,6	-5,7	-1,9	-2,3	.	8,7	.
Jun	103,0	193,3	126,4	49,1	20,4	23,2	.	22,7	.
Jul	89,0	163,2	107,1	-13,6	-15,6	-15,3	38,4	16,7	19,0
Aug	92,7	168,0	110,3	4,2	2,9	3,0	12,2	16,1	15,6
Sep	87,1	199,9	127,9	-6,0	19,0	16,0	-49,6	26,8	10,2
Okt	84,2	183,5	118,0	-3,3	-8,2	-7,7	19,9	19,5	19,4
Nov	88,6	167,8	109,6	5,2	-8,6	-7,1	-15,0	10,1	6,4
Dez	99,0	168,4	111,5	11,7	0,4	1,7	-6,4	19,4	15,3
1992 Jan	96,7	136,2	92,6	-2,3	-19,1	-17,0	40,8	21,2	23,8
Feb	95,1	174,3	114,3	-1,7	28,0	23,4	45,6	31,7	33,2
Mrz	93,7	214,9	137,5	-1,5	23,3	20,3	15,8	16,6	16,5
Apr	108,0	181,1	120,1	15,3	-15,7	-12,7	47,3	10,6	14,4
Mai	103,4	175,9	116,4	-4,3	-2,9	-3,1	49,6	9,5	13,5
Jun	127,2	234,1	153,4	23,0	33,1	31,8	23,5	21,1	21,4
Jul	124,7	176,7	120,0	-2,0	-24,5	-21,8	40,1	8,3	12,0
Aug	92,8	176,8	115,4	-25,6	0,1	-3,8	0,1	5,2	4,6
Sep	128,2	210,6	140,0	38,1	19,1	21,3	47,2	5,4	9,5
Okt	136,2	200,3	135,3	6,2	-4,9	-3,4	61,8	9,2	14,7
Nov	128,2	187,3	126,6	-5,9	-6,5	-6,4	44,7	11,6	15,5
Dez	169,7	203,5	142,0	32,4	8,6	12,2	71,4	20,8	27,4
1993 Jan	121,1	155,9	107,5	-28,6	-23,4	-24,3	25,2	14,5	16,1
Feb	132,9	168,8	116,6	9,7	8,3	8,5	39,7	-3,2	2,0
Mrz	178,1	261,9	176,9	34,0	55,2	51,7	90,1	21,9	28,7
Apr	159,9	221,5	150,9	-10,2	-15,4	-14,7	48,1	22,3	25,6
Mai	172,4	216,4	149,8	7,8	-2,3	-0,7	66,7	23,0	28,7
Jun	258,5	259,3	187,1	49,9	19,8	24,9	103,2	10,8	22,0

*) Wertindex (in jeweiligen Preisen)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27

10 Baugewerbe
10.1 Index des Auftragsengangs für das Bauhauptgewerbe *)
10.1.3 Hochbau - Neue Länder und Berlin-Ost

Zeitraum	Wirt- schafts- bau 1)	Reichs- bahn, Post	öffent- licher Bau 2)	Wirt- schafts- bau 1)	Reichs- bahn, Post	öffent- licher Bau 2)	Wirt- schafts- bau 1)	Reichs- bahn, Post	öffent- licher Bau 2)
	2. Halbjahr 1990 = 100			Veränderung gegenüber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4. Vj.	98,3	81,3	120,0	-3,3	31,5	50,0			
1991 1. Vj.	85,9	83,9	120,2	-12,6	3,2	0,2			
2. Vj.	127,6	113,8	278,6	48,5	35,6	131,8			
3. Vj.	150,8	200,5	368,8	18,2	76,2	32,4	48,3	68,9	361,1
4. Vj.	155,9	144,0	328,3	3,4	-28,2	-11,0	58,6	77,1	173,6
1992 1. Vj.	178,3	106,3	297,2	14,3	-26,1	-9,5	107,6	26,7	147,3
2. Vj.	217,8	167,4	322,9	22,2	57,5	8,7	70,7	47,1	15,9
3. Vj.	222,1	258,4	357,0	2,0	54,3	10,6	47,3	28,9	-3,2
4. Vj.	230,7	230,4	377,8	3,9	-10,8	5,8	48,0	60,0	15,1
1993 1. Vj.	215,8	210,0	254,6	-6,5	-8,9	-32,6	21,0	97,6	-14,3
2. Vj.	244,0	154,6	346,2	13,1	-26,4	36,0	12,0	-7,6	7,2
1990 Okt	109,3	62,7	130,8	12,3	-43,0	50,9			
Nov	89,6	86,9	97,5	-18,0	38,6	-25,5			
Dez	95,6	94,2	131,8	7,0	8,4	35,2			
1991 Jan	81,4	74,3	118,2	-15,1	-21,1	-10,3			
Feb	71,7	103,1	87,1	-11,9	38,8	-26,3			
Mrz	104,5	74,2	155,3	45,7	-28,0	78,3			
Apr	111,2	115,9	245,8	6,4	56,2	58,3			
Mai	128,6	118,1	321,0	15,6	1,9	30,6			
Jun	143,1	107,5	269,0	11,3	-9,0	-16,2			
Jul	145,5	321,9	363,7	1,7	199,4	35,2	50,3	95,6	343,0
Aug	138,3	175,5	342,2	-4,9	-45,5	-5,9	24,5	115,1	380,6
Sep	168,5	104,1	400,6	21,8	-40,7	17,1	73,2	-5,4	362,1
Okt	177,8	162,2	338,8	5,5	55,8	-15,4	62,7	158,7	159,0
Nov	142,0	92,9	310,4	-20,1	-42,7	-8,4	58,5	6,9	218,4
Dez	147,9	176,8	335,7	4,2	90,3	8,2	54,2	87,7	154,7
1992 Jan	149,0	110,1	287,9	0,7	-37,7	-14,2	83,0	48,2	143,6
Feb	182,4	104,3	294,0	22,4	-5,3	2,1	154,4	1,2	237,5
Mrz	203,4	104,6	309,6	11,5	0,3	5,3	94,6	41,0	99,4
Apr	203,4	97,0	265,6	0,0	-7,3	-14,2	82,9	-16,3	8,1
Mai	212,5	188,1	363,1	4,5	93,9	36,7	65,2	59,3	13,1
Jun	237,4	217,2	340,0	11,7	15,5	-6,4	65,9	102,0	26,4
Jul	210,9	182,6	430,3	-11,2	-15,9	26,6	44,9	-43,3	18,3
Aug	211,3	416,9	299,5	0,2	128,3	-30,4	52,8	137,5	-12,5
Sep	244,1	175,7	341,3	15,5	-57,9	14,0	44,9	68,8	-14,8
Okt	227,9	280,1	378,6	-6,6	59,4	10,9	28,2	72,7	11,7
Nov	198,6	181,0	393,8	-12,9	-35,4	4,0	39,9	94,8	26,9
Dez	265,6	230,0	360,9	33,7	27,1	-8,4	79,6	30,1	7,5
1993 Jan	173,7	188,1	216,7	-34,6	-18,2	-40,0	16,6	70,8	-24,7
Feb	192,5	242,9	215,6	10,8	29,1	-0,5	5,5	132,9	-26,7
Mrz	281,3	199,0	331,4	46,1	-18,1	53,7	38,3	90,2	7,0
Apr	218,0	178,2	275,9	-22,5	-10,5	-16,7	7,2	83,7	3,9
Mai	236,5	127,4	367,0	8,5	-28,5	33,0	11,3	-32,3	1,1
Jun	277,5	158,1	395,8	17,3	24,1	7,8	16,9	-27,2	16,4

*) Wertindex (in jeweiligen Preisen).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 Gewerblicher und industrieller Bau für Unternehmen (ohne Reichsbahn und Bundespost) sowie landwirtschaftlicher Bau.

2) Bauten für öffentliche Auftraggeber und Organisationen ohne Erwerbszweck.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28

10 Baugewerbe
10.1 Index des Auftragseingangs für das Bauhauptgewerbe *)
10.1.4 Tiefbau - Neue Länder und Berlin-Ost

Zeitraum	Wirt- schafts- bau 1)	Reichsbahn, Post, Straße	öffent- licher Bau 2)	Wirt- schafts- bau 1)	Reichsbahn, Post, Straße	öffent- licher Bau 2)	Wirt- schafts- bau 1)	Reichsbahn, Post, Straße	öffent- licher Bau 2)
	2. Halbjahr 1990 =100			Veränderung gegenüber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4. Vj.	110,4	107,1	116,0	23,2	15,7	38,1			
1991 1. Vj.	71,9	77,3	169,0	-34,9	-27,8	45,7			
2. Vj.	91,4	180,8	269,2	27,1	133,8	59,3			
3. Vj.	126,9	308,3	421,8	38,8	70,5	56,7	41,6	232,8	402,1
4. Vj.	127,5	223,8	452,6	0,5	-27,4	7,3	15,5	108,9	290,2
1992 1. Vj.	131,6	179,6	337,3	3,2	-19,7	-25,5	83,0	132,3	99,6
2. Vj.	174,6	240,9	501,1	32,7	34,1	48,5	91,0	33,3	86,1
3. Vj.	195,4	302,0	560,5	11,9	25,4	11,9	54,0	-2,0	32,9
4. Vj.	213,7	330,8	632,1	9,4	9,5	12,8	67,6	47,8	39,7
1993 1. Vj.	200,8	211,1	442,0	-6,0	-36,2	-30,1	52,6	17,5	31,0
2. Vj.	270,9	291,0	658,7	34,9	37,9	49,0	55,2	20,8	31,5
1990 Okt	110,2	119,0	116,8	-21,3	4,3	13,1			
Nov	120,9	103,6	103,9	9,7	-12,9	-11,0			
Dez	100,0	98,8	127,2	-17,3	-4,6	22,4			
1991 Jan	78,2	77,0	139,0	-21,8	-22,1	9,3			
Feb	49,7	62,4	162,1	-36,4	-19,0	16,6			
Mrz	87,7	92,6	206,0	76,5	48,4	27,1			
Apr	87,2	118,0	252,5	-0,6	27,4	22,6			
Mai	85,0	156,7	232,1	-2,5	32,8	-8,1			
Jun	102,0	267,6	323,1	20,0	70,8	39,2			
Jul	124,4	249,6	350,2	22,0	-6,7	8,4	133,4	279,1	506,9
Aug	119,2	312,3	433,7	-4,2	25,1	23,8	57,9	218,9	376,6
Sep	137,0	362,9	481,5	14,9	16,2	11,0	-2,2	218,1	366,1
Okt	137,2	258,3	545,5	0,1	-28,8	13,3	24,5	117,1	367,0
Nov	114,9	239,7	465,0	-16,3	-7,2	-14,8	-5,0	131,4	347,5
Dez	130,5	173,4	347,3	13,6	-27,7	-25,3	30,5	75,5	173,0
1992 Jan	124,0	170,9	243,8	-5,0	-1,4	-29,8	58,6	121,9	75,4
Feb	86,1	137,1	307,6	-30,6	-19,8	26,2	73,2	119,7	89,8
Mrz	184,6	230,9	460,6	114,4	68,4	49,7	110,5	149,4	123,6
Apr	156,1	202,8	498,9	-15,4	-12,2	8,3	79,0	71,9	97,6
Mai	148,6	251,5	434,6	-4,8	24,0	-12,9	74,8	60,5	87,2
Jun	219,1	268,4	569,7	47,4	6,7	31,1	114,8	0,3	76,3
Jul	188,2	274,1	464,2	-14,1	2,1	-18,5	51,3	9,8	32,6
Aug	174,9	309,9	556,3	-7,1	13,1	19,8	46,7	-0,8	28,3
Sep	223,0	322,1	660,9	27,5	3,9	18,8	62,8	-11,2	37,3
Okt	218,7	360,8	661,9	-1,9	12,0	0,2	59,4	39,7	21,3
Nov	246,1	265,1	593,9	12,5	-26,5	-10,3	114,2	10,6	27,7
Dez	176,2	366,6	640,5	-28,4	38,3	7,8	35,0	111,4	84,4
1993 Jan	169,1	173,8	412,9	-4,0	-32,6	-35,5	36,4	1,7	69,4
Feb	180,9	187,3	383,4	7,0	7,8	-7,1	110,1	36,6	24,6
Mrz	252,4	272,1	529,8	39,5	45,3	38,2	36,7	17,8	15,0
Apr	265,6	260,6	573,3	5,2	-4,2	8,2	70,1	28,5	14,9
Mai	263,7	289,3	673,0	-0,7	11,0	17,4	77,5	15,0	54,9
Jun	283,5	323,2	729,9	7,5	11,7	8,5	29,4	20,4	28,1

*) Wertindex (in jeweiligen Preisen).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 Gewerblicher und industrieller Bau für Unternehmen (ohne Reichsbahn und Bundespost).

2) Bauten für öffentliche Auftraggeber und Organisationen ohne Erwerbszweck.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31

10 Baugewerbe
10.3 Umsatz im Bauhauptgewerbe *)
10.3.2 Wohnungsbau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 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 land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1)	
							Millionen DM		Prozent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4 341	23 585	27 926	 	 	 	 	 	 	 	
1992	4 381	28 350	32 731	 	 	 	 	 	 	 	
1991 1. Vj.	839	3 859	4 698	.	-39,0	.	.	9,9	.	.	17,9
2. Vj.	1 131	5 931	7 062	34,8	53,7	50,3	.	24,3	.	.	16,0
3. Vj.	1 137	6 381	7 518	0,5	7,6	6,4	.	23,0	.	.	15,1
4. Vj.	1 233	7 415	8 648	8,4	16,2	15,0	.	17,3	.	.	14,3
1992 1. Vj.	670	5 005	5 676	-45,7	-32,5	-34,4	-20,2	29,7	20,8		11,8
2. Vj.	935	6 741	7 676	39,6	34,7	35,2	-17,3	13,7	8,7		12,2
3. Vj.	1 036	7 300	8 336	10,8	8,3	8,6	-8,9	14,4	10,9		12,4
4. Vj.	1 740	9 304	11 044	67,9	27,5	32,5	41,1	25,5	27,7		15,8
1993 1. Vj.	804	5 324	6 129	-53,8	-42,8	-44,5	20,0	6,4	8,0		13,1
2. Vj.	1 378	7 532	8 910	71,2	41,5	45,4	47,3	11,7	16,1		15,5

alle Betriebe

1992	6 895	58 312	65 208	X	X	X	 	 	 	 	 	10,6
1992 1. Vj.	965	10 422	11 387	-37,2	-31,9	-32,4	 	 	 	 	 	8,5
2. Vj.	1 614	14 104	15 718	67,2	35,3	38,0	 	 	 	 	 	10,3
3. Vj.	1 778	15 189	16 967	10,1	7,7	7,9	 	 	 	 	 	10,5
4. Vj.	2 538	18 598	21 136	42,8	22,4	24,6	65,1	21,5	25,5		12,0	
1993 1. Vj.	1 179	10 704	11 883	-53,5	-42,4	-43,8	22,2	2,7	4,4		9,9	
2. Vj.	2 052	15 135	17 187	74,0	41,4	44,6	27,1	7,3	9,4		11,9	
1992 Jan	201	3 033	3 234	-63,8	-45,1	-46,8	 	7,2	 	 	6,2	
Feb	292	3 236	3 528	45,3	6,7	9,1	 	37,1	 	 	8,3	
Mrz	473	4 153	4 625	61,9	28,3	31,1	 	25,8	 	 	10,2	
Apr	531	4 393	4 924	12,5	5,8	6,5	 	11,5	 	 	10,8	
Mai	536	4 670	5 206	0,8	6,3	5,7	 	11,5	 	 	10,3	
Jun	547	5 040	5 587	2,1	7,9	7,3	 	9,3	 	 	9,8	
Jul	561	5 190	5 752	2,6	3,0	2,9	 	6,9	 	 	9,8	
Aug	603	4 644	5 247	7,3	-10,5	-8,8	 	9,0	 	 	11,5	
Sep	614	5 354	5 968	1,9	15,3	13,7	 	17,2	 	 	10,3	
Okt	739	5 553	6 292	20,4	3,7	5,4	38,9	13,7	16,1		11,7	
Nov	693	5 718	6 411	-6,2	3,0	1,9	53,7	16,7	19,8		10,8	
Dez	1 106	7 327	8 433	59,5	28,2	31,5	99,4	32,7	38,8		13,1	
1993 Jan	287	3 278	3 566	-74,0	-55,3	-57,7	43,0	8,1	10,3		8,1	
Feb	379	3 078	3 457	32,1	-6,1	-3,0	29,9	-4,9	-2,0		11,0	
Mrz	513	4 347	4 860	35,2	41,2	40,6	8,5	4,7	5,1		10,6	
Apr	575	4 589	5 165	12,2	5,6	6,3	8,3	4,5	4,9		11,1	
Mai	628	4 990	5 617	9,1	8,7	8,8	17,2	6,8	7,9		11,2	
Jun	849	5 557	6 406	35,3	11,4	14,0	55,2	10,2	14,6		13,3	

*) Ohne Umsatz-(Mehrwert-)steuer.

1) A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32

**10 Baugewerbe
10.4 Beschäftigte im Bauhauptgewerbe**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 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 land	Veränderung gegenüber			Anteil der neuen Länder und Berlin-Ost 1)			
							1 000 Personen				Prozent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Prozent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D	281	710	991	·	-4,3	·	·	4,0	·	28,4
1992 D	275	726	1 001	-2,3	2,2	0,9	·	·	·	27,5
1991 1. Vj. D	288	678	966	·	-4,3	·	·	4,3	·	29,8
2. Vj. D	283	707	990	-1,7	4,3	2,5	·	4,4	·	28,6
3. Vj. D	273	723	996	-3,5	2,2	0,6	·	4,2	·	27,4
4. Vj. D	282	732	1 014	3,4	1,3	1,9	·	3,3	·	27,8
1992 1. Vj. D	270	701	971	-4,2	-4,2	-4,2	-6,1	3,4	0,6	27,8
2. Vj. D	271	723	994	0,3	3,1	2,4	-4,1	2,2	0,4	27,3
3. Vj. D	267	735	1 003	-1,4	1,7	0,9	-2,0	1,8	0,7	26,7
4. Vj. D	291	744	1 035	8,7	1,2	3,2	3,0	1,7	2,0	28,1
1993 1. Vj. D	288	707	995	-1,0	-5,0	-3,8	6,5	0,9	2,4	28,9
2. Vj. D	290	729	1 019	0,8	3,0	2,4	6,9	0,8	2,5	28,5

alle Betriebe

1992 D	335	1 076	1 412	X	X	X	·	·	·	2,0
1992 1. Vj. D	316	1 039	1 355	0,7	-3,5	-2,5	·	·	·	23,4
2. Vj. D	346	1 081	1 427	9,4	4,1	5,3	·	·	·	24,2
3. Vj. D	344	1 098	1 442	-0,7	1,6	1,0	·	·	·	23,8
4. Vj. D	335	1 087	1 422	-2,5	-1,1	-1,4	6,7	1,0	2,3	23,6
1993 1. Vj. D	332	1 035	1 367	-1,0	-4,7	-3,8	4,9	-0,3	0,9	24,3
2. Vj. D	334	1 064	1 398	0,8	2,8	2,3	-3,4	-1,6	-2,0	23,9
1992 Jan	299	1 033	1 332	-3,4	-3,2	-3,2	·	1,9	·	22,5
Feb	301	1 020	1 321	0,5	-1,3	-0,9	·	2,3	·	22,8
Mrz	349	1 064	1 413	15,9	4,3	6,9	·	2,2	·	24,7
Apr	348	1 075	1 423	-0,2	1,1	0,8	·	1,2	·	24,5
Mai	349	1 082	1 431	0,3	0,6	0,5	·	1,3	·	24,4
Jun	341	1 087	1 428	-2,4	0,5	-0,2	·	1,7	·	23,9
Jul	342	1 092	1 434	0,3	0,5	0,4	·	1,2	·	23,8
Aug	343	1 099	1 442	0,4	0,6	0,6	·	1,2	·	23,8
Sep	346	1 103	1 449	0,8	0,4	0,5	·	1,2	·	23,9
Okt	335	1 095	1 431	-3,0	-0,7	-1,3	5,5	1,2	2,2	23,4
Nov	337	1 088	1 425	0,4	-0,6	-0,4	7,0	0,9	2,3	23,6
Dez	333	1 076	1 410	-1,0	-1,1	-1,1	7,5	0,9	2,4	23,6
1993 Jan	334	1 039	1 373	0,1	-3,5	-2,6	11,4	0,6	3,0	24,3
Feb	331	1 023	1 354	-0,9	-1,5	-1,4	9,8	0,3	2,5	24,4
Mrz	331	1 044	1 375	0,1	2,0	1,6	-5,1	-1,9	-2,7	24,1
Apr	334	1 059	1 393	0,9	1,5	1,3	-4,1	-1,5	-2,1	24,0
Mai	335	1 063	1 397	0,2	0,4	0,3	-4,2	-1,7	-2,3	23,9
Jun	335	1 070	1 404	0,0	0,6	0,5	-1,8	-1,6	-1,7	23,8

1) An Deutschland insgesamt (Deutschland = 100).

Nummer 133

10 Baugewerbe
10.5 Geleistete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10.5.1 Insgesamt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Veränderung gegenüber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1 000 Stunden		Prozent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320 995	893 628	 	 	.	1,4
1992	354 894	925 893	 	 	10,6	3,6
1991 1. Vj.	69 567	173 155	.	-22,1	.	-9,5
2. Vj.	81 404	245 184	17,0	41,6	.	5,6
3. Vj.	84 950	248 277	4,4	1,3	.	5,3
4. Vj.	85 074	227 012	0,1	-8,6	.	2,1
1992 1. Vj.	79 821	194 539	-6,2	-14,3	14,7	12,3
2. Vj.	88 122	246 131	10,4	26,5	8,3	0,4
3. Vj.	91 904	249 732	4,3	1,5	8,2	0,6
4. Vj.	95 047	235 491	3,4	-5,7	11,7	3,7
1993 1. Vj.	79 712	183 270	-16,1	-22,2	-0,1	-5,8
2. Vj.	100 251	246 537	25,8	34,5	13,8	0,2

alle Betriebe

1992	451 556	1 376 084	X	X	 	3,4
1992 1. Vj.	97 081	290 013	0,2	-12,4	 	10,8
2. Vj.	118 416	368 648	22,0	27,1	 	0,2
3. Vj.	124 465	372 497	5,1	1,0	 	0,7
4. Vj.	111 594	344 926	-10,3	-7,4	15,2	4,2
1993 1. Vj.	93 926	272 873	-15,8	-20,9	-3,2	-5,9
2. Vj.	118 369	365 259	26,0	33,9	-0,0	-0,9
1992 Jan	28 321	84 128	11,6	3,9	 	-6,0
Feb	28 497	89 606	0,6	6,5	 	46,1
Mrz	40 263	116 279	41,3	29,8	 	4,7
Apr	39 705	123 274	-1,4	6,0	 	-3,7
Mai	37 837	119 651	-4,7	-2,9	 	2,5
Jun	40 874	125 723	8,0	5,1	 	2,1
Jul	41 707	126 105	2,0	0,3	 	-2,0
Aug	38 759	111 571	-7,1	-11,5	 	-1,3
Sep	43 999	134 821	13,5	20,8	 	5,2
Okt	41 516	132 580	-5,6	-1,7	13,9	-1,2
Nov	38 842	117 603	-6,4	-11,3	10,7	1,5
Dez	31 236	94 743	-19,6	-19,4	23,1	17,0
1993 Jan	29 116	77 114	-6,8	-18,6	2,8	-8,3
Feb	27 163	79 600	-6,7	3,2	-4,7	-11,2
Mrz	37 647	116 159	38,6	45,9	-6,5	-0,1
Apr	38 699	120 323	2,8	3,6	-2,5	-2,4
Mai	36 957	116 368	-4,5	-3,3	-2,3	-2,7
Jun	42 713	128 568	15,6	10,5	4,5	2,3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34

10 Baugewerbe
10.5 Geleistete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10.5.2 Wohnungsbau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Veränderung gegenüber Vorquartal/Vormonat		Anteil der Bauarten an insgesamt	
1 000 Stunden			Prozent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60 405	202 333	X	X	18,8	22,6
1992	56 600	218 845	X	X	15,9	23,6
1991 1. Vj.	14 694	39 568	.	-20,3	21,1	22,9
2. Vj.	16 723	56 216	13,8	42,1	20,5	22,9
3. Vj.	15 327	54 854	-8,3	-2,4	18,0	22,1
4. Vj.	13 661	51 695	-10,9	-5,8	16,1	22,8
1992 1. Vj.	12 129	45 551	-11,2	-11,9	15,2	23,4
2. Vj.	14 035	57 901	15,7	27,1	15,9	23,5
3. Vj.	14 492	57 464	3,3	-0,8	15,8	23,0
4. Vj.	15 944	57 929	10,0	0,8	16,8	24,6
1993 1. Vj.	13 617	46 677	-14,6	-19,4	17,1	25,5
2. Vj.	18 472	64 378	35,7	37,9	18,4	26,1

alle Betriebe

1992	94 883	522 014	X	X	21,0	37,9
1992 1. Vj.	18 470	109 350	1,5	-9,6	19,0	37,7
2. Vj.	25 833	140 420	39,9	28,4	21,8	38,1
3. Vj.	26 995	139 232	4,5	-0,8	21,7	37,4
4. Vj.	23 585	133 012	-12,6	-4,5	21,1	38,6
1993 1. Vj.	20 125	108 598	-14,7	-18,4	21,4	39,8
2. Vj.	27 479	148 120	36,5	36,4	23,2	40,6
1992 Jan	5 233	31 800	16,8	9,8	18,5	37,8
Feb	5 024	33 742	-4,0	6,1	17,6	37,7
Mrz	8 213	43 808	63,5	29,8	20,4	37,7
Apr	8 403	46 934	2,3	7,1	21,2	38,1
Mai	8 179	45 710	-2,7	-2,6	21,6	38,2
Jun	9 251	47 776	13,1	4,5	22,6	38,0
Jul	9 089	46 800	-1,8	-2,0	21,8	37,1
Aug	8 320	41 361	-8,5	-11,6	21,5	37,1
Sep	9 586	51 071	15,2	23,5	21,8	37,9
Okt	8 726	50 681	-9,0	-0,8	21,0	38,2
Nov	8 151	45 390	-6,6	-10,4	21,0	38,6
Dez	6 708	36 941	-17,7	-18,6	21,5	39,0
1993 Jan	6 195	31 126	-7,6	-15,7	21,3	40,4
Feb	5 822	31 343	-6,0	0,7	21,4	39,4
Mrz	8 108	46 129	39,3	47,2	21,5	39,7
Apr	8 430	48 455	4,0	5,0	21,8	40,3
Mai	8 533	47 264	1,2	-2,5	23,1	40,6
Jun	10 516	52 401	23,2	10,9	24,6	40,8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39

10 Baugewerbe

10.9 Beschäftigte im Baugewerbe nach Ländern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Bauhauptgewerbe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D	51 956	37 634	72 928	57 237	41 357	20 298
1992 D	47 830	34 804	71 078	59 471	43 212	18 477
1991 1. Vj. D	53 393	40 553	73 162	57 259	42 827	20 504
2. Vj. D	52 181	37 877	73 281	57 586	40 777	21 062
3. Vj. D	49 793	35 427	72 580	55 475	39 608	20 033
4. Vj. D	52 457	36 680	72 689	58 627	42 215	19 593
1992 1. Vj. D	49 352	33 559	70 177	57 173	41 191	18 825
2. Vj. D	47 947	34 151	71 623	57 285	41 412	18 770
3. Vj. D	45 388	34 738	70 019	56 040	43 107	18 087
4. Vj. D	48 633	36 765	72 494	67 386	47 139	18 226
1993 1. Vj. D	46 605	35 219	71 965	69 796	45 960	18 212
2. Vj. D	46 431	34 887	73 358	70 099	47 565	17 653
alle Betriebe						
1992 D	55 841	42 199	84 889	77 308	53 913	21 183
1992 1. Vj. D	56 047	39 452	81 088	69 275	49 760	20 841
2. Vj. D	58 069	42 757	88 230	81 075	53 946	22 020
3. Vj. D	54 970	43 875	86 943	80 370	56 189	21 281
4. Vj. D	54 276	42 712	83 294	78 513	55 755	20 589
1993 1. Vj. D	52 034	40 809	82 821	81 263	54 324	20 562
2. Vj. D	51 884	40 528	84 370	81 544	56 165	19 935
Ausbaugewerbe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D	8 250	5 862	19 368	12 377	10 043	6 171
1992 D	8 473	6 464	21 812	14 532	13 227	6 750
1991 1. Vj. D	8 030	5 679	17 464	12 358	9 596	5 749
2. Vj. D	8 065	5 642	18 223	12 135	9 670	6 334
3. Vj. D	8 483	5 569	20 569	11 739	9 517	6 047
4. Vj. D	8 423	6 557	21 215	13 277	11 390	6 553
1992 1. Vj. D	7 984	6 455	21 335	13 989	11 726	6 617
2. Vj. D	8 124	6 310	21 319	13 846	12 171	6 967
3. Vj. D	8 168	6 173	21 339	13 462	13 342	6 568
4. Vj. D	9 615	6 917	23 257	16 831	15 669	6 849
1993 1. Vj. D	9 492	6 970	23 854	17 200	16 468	6 770
2. Vj. D	9 649	7 088	24 309	17 847	17 521	6 917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0

10 Baugewerbe
10.10 Geleistete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nach Ländern
1 000 Stunden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	-------------	----------------------------	---------	----------------	-----------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57 863	40 266	86 015	66 012	47 575	23 264
1992	60 019	43 562	92 710	79 927	56 026	22 650
1991 1. Vj.	12 309	9 498	18 624	14 123	9 576	5 437
2. Vj.	14 488	9 910	22 228	16 463	12 197	6 118
3. Vj.	15 312	10 104	23 392	17 106	13 000	6 036
4. Vj.	15 754	10 754	21 771	18 320	12 802	5 673
1992 1. Vj.	14 300	9 479	21 141	17 610	11 756	5 535
2. Vj.	14 851	10 821	23 816	19 207	13 813	5 614
3. Vj.	15 075	11 502	24 173	19 966	15 277	5 911
4. Vj.	15 793	11 760	23 580	23 144	15 180	5 590
1993 1. Vj.	13 171	9 322	19 546	20 306	11 734	5 633
2. Vj.	15 855	11 437	25 775	22 412	16 881	7 891

alle Betriebe

1992	72 761	59 311	113 493	107 819	71 550	26 622
1992 1. Vj.	16 789	12 232	25 025	22 222	14 592	6 221
2. Vj.	18 818	15 861	30 093	28 308	18 524	6 812
3. Vj.	19 145	17 148	30 842	29 819	20 360	7 151
4. Vj.	18 009	14 070	27 533	27 470	18 074	6 438
1993 1. Vj.	15 006	11 220	22 993	24 147	14 055	6 505
2. Vj.	18 105	13 781	30 361	29 163	20 178	6 781
1992 Jan	5 121	3 455	7 420	6 126	4 294	1 905
Feb	5 090	3 543	7 413	6 236	4 301	1 914
Mrz	6 578	5 234	10 192	9 860	5 997	2 402
Apr	6 399	5 109	10 199	9 631	6 082	2 285
Mai	6 001	5 082	9 745	9 058	5 780	2 171
Jun	6 418	5 670	10 149	9 619	6 662	2 356
Jul	6 313	5 693	10 391	10 185	6 782	2 343
Aug	6 068	5 227	9 674	9 208	6 243	2 339
Sep	6 764	6 228	10 777	10 426	7 335	2 469
Okt	6 721	5 271	10 194	10 088	6 857	2 385
Nov	6 224	4 806	9 718	9 495	6 317	2 282
Dez	5 064	3 993	7 621	7 887	4 900	1 771
1993 Jan	4 612	3 372	7 323	7 374	4 346	2 089
Feb	4 357	3 337	6 613	7 190	3 672	1 994
Mrz	6 037	4 511	9 057	9 583	6 037	2 422
Apr	6 057	4 545	9 817	9 478	6 507	2 295
Mai	5 629	4 258	9 476	9 218	6 169	2 207
Jun	6 419	4 978	11 068	10 467	7 502	2 279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1

10 Baugewerbe
10.11 Struktur der geleisteten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nach Bauarten und Ländern
10.11.1 Wohnungsbau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Geleistete Arbeitsstunden je Bundesland insgesamt = 100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D	19,4	20,4	17,6	15,6	18,3	29,5
1992 D	16,8	16,2	14,8	14,3	13,7	29,2
1991						
1. Vj.	21,5	23,1	21,6	17,8	20,8	24,5
2. Vj.	22,2	22,8	19,3	16,5	20,5	28,6
3. Vj.	19,0	19,4	15,7	14,9	17,8	31,8
4. Vj.	15,8	16,7	14,3	13,7	14,7	32,8
1992						
1. Vj.	15,5	15,6	13,7	14,1	12,8	28,1
2. Vj.	16,7	15,0	15,0	14,4	14,1	29,4
3. Vj.	17,4	15,6	14,7	13,7	13,6	28,7
4. Vj.	17,6	18,3	15,7	14,9	14,1	30,6
1993						
1. Vj.	16,4	18,3	16,3	15,5	14,4	30,8
2. Vj.	18,0	20,5	17,9	18,9	15,7	22,1

alle Betriebe

1992	20,4	25,3	20,2	19,0	18,2	32,3
1992						
1. Vj.	18,1	22,3	17,9	17,7	16,3	30,9
2. Vj.	20,6	27,5	20,9	19,5	19,2	32,7
3. Vj.	21,4	28,4	20,8	18,6	18,6	32,1
4. Vj.	21,4	21,8	20,9	19,9	18,4	33,2
1993						
1. Vj.	19,9	21,6	21,5	20,7	18,6	33,4
2. Vj.	21,8	24,2	23,5	23,0	20,4	32,9
1992						
Jan	17,8	20,3	17,7	19,0	13,6	29,5
Feb	16,9	17,1	16,9	16,1	16,4	31,1
Mrz	19,3	27,0	18,7	17,9	18,1	32,0
Apr	20,5	26,1	20,3	19,2	18,4	31,2
Mai	20,4	25,6	21,2	19,9	18,5	33,2
Jun	20,8	30,7	21,3	19,3	20,5	33,7
Jul	21,9	27,7	20,4	18,7	19,8	32,4
Aug	20,8	28,3	20,4	18,9	18,5	30,7
Sep	21,3	29,1	21,4	18,3	17,6	33,3
Okt	21,7	21,1	20,5	20,1	18,5	32,4
Nov	21,3	21,1	20,9	20,0	18,2	32,1
Dez	21,1	23,5	21,4	19,6	18,3	35,7
1993						
Jan	19,9	21,9	20,1	20,9	18,4	34,9
Feb	20,3	21,5	22,2	19,8	18,7	32,3
Mrz	19,5	21,4	22,1	21,2	18,8	33,0
Apr	20,1	22,7	21,9	21,8	19,0	32,1
Mai	21,8	23,7	23,2	22,5	19,5	37,4
Jun	23,3	26,0	25,3	24,4	22,6	29,4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2

10 Baugewerbe
10.11 Struktur der geleisteten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nach Bauarten und Ländern
10.11.2 Wirtschaftsbau *)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Geleistete Arbeitsstunden je Bundesland insgesamt = 100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43,7	40,8	44,8	46,7	43,1	43,7
1992	43,5	43,0	44,5	46,9	44,2	43,9
1991 1. Vj.	47,9	44,0	46,5	49,6	48,0	51,5
2. Vj.	43,4	39,9	45,4	48,5	44,9	42,7
3. Vj.	41,3	40,8	45,0	46,1	40,9	41,1
4. Vj.	43,0	38,9	42,4	43,2	39,9	40,1
1992 1. Vj.	44,9	43,7	46,2	45,0	46,5	43,6
2. Vj.	43,2	44,6	43,3	45,9	43,4	45,8
3. Vj.	44,1	43,8	44,8	48,0	43,0	43,8
4. Vj.	41,8	40,2	44,0	48,2	44,2	42,6
1993 1. Vj.	46,4	45,8	49,8	48,9	49,5	41,7
2. Vj.	44,0	42,0	45,3	49,6	43,1	31,4

alle Betriebe

1992	42,3	39,7	43,0	46,7	43,1	42,1
1992 1. Vj.	43,9	41,4	44,9	44,7	45,2	41,7
2. Vj.	41,8	39,3	41,7	46,1	42,4	43,8
3. Vj.	42,7	38,4	43,3	48,5	42,3	41,7
4. Vj.	40,9	40,1	42,2	47,0	43,2	41,0
1993 1. Vj.	45,4	45,3	47,5	47,6	48,0	40,0
2. Vj.	42,9	41,5	43,1	44,1	41,9	40,4
1992 Jan	44,8	42,3	45,3	41,5	46,6	41,6
Feb	44,6	42,7	46,9	45,1	46,0	43,6
Mrz	42,6	39,9	43,2	46,5	43,5	40,3
Apr	41,0	41,0	41,5	46,2	42,4	44,3
Mai	42,6	39,9	42,4	45,3	42,5	44,5
Jun	41,9	37,4	41,3	46,8	42,3	42,6
Jul	41,8	40,4	44,0	48,4	40,7	43,0
Aug	43,1	37,2	43,5	47,4	42,0	42,5
Sep	43,2	37,7	42,4	49,4	44,0	39,7
Okt	41,7	40,6	42,7	46,9	42,3	41,2
Nov	40,7	40,9	42,1	46,7	43,3	40,3
Dez	40,0	38,3	41,8	47,5	44,2	41,6
1993 Jan	45,0	46,6	49,0	46,9	49,9	39,4
Feb	45,3	45,3	48,5	48,9	49,5	41,3
Mrz	45,7	44,4	45,6	47,0	45,7	39,4
Apr	43,4	42,5	44,8	44,2	44,3	40,3
Mai	43,5	41,9	41,9	44,7	42,6	38,9
Jun	42,0	40,2	42,6	43,5	39,2	41,9

*) Gewerblicher und industrieller Bau (ohne Bahn und Post), landwirtschaftlicher Bau.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3

10 Baugewerbe
10.11 Struktur der geleisteten Arbeitsstunden im Bauhauptgewerbe nach Bauarten und Ländern
10.11.3 Öffentlicher Bau *)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Geleistete Arbeitsstunden je Bundesland insgesamt = 100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1991	36,9	38,8	37,6	37,7	38,7	26,8
1992	39,7	40,8	40,7	38,8	42,1	26,9
1991	30,7	32,9	31,9	32,6	31,2	24,0
2. Vj.	34,4	37,4	35,3	34,9	34,6	28,8
3. Vj.	39,7	39,8	39,2	39,0	41,3	27,2
4. Vj.	41,2	44,4	43,2	43,1	45,4	27,1
1992	39,6	40,7	40,1	40,9	40,7	28,3
2. Vj.	40,1	40,4	41,7	39,7	42,5	24,8
3. Vj.	38,5	40,6	40,4	38,3	43,3	27,5
4. Vj.	40,5	41,4	40,3	36,9	41,7	26,8
1993	37,2	36,0	33,9	35,6	36,2	27,5
2. Vj.	38,0	37,5	36,8	40,4	41,1	20,8

alle Betriebe

1992	37,3	35,0	36,8	34,3	38,6	25,7
1992	38,0	36,3	37,2	37,6	38,5	27,3
2. Vj.	37,6	33,1	37,3	34,4	38,4	23,5
3. Vj.	35,9	33,2	36,0	32,9	39,1	26,1
4. Vj.	37,8	38,2	36,9	33,1	38,5	25,8
1993	34,8	33,1	31,0	31,8	33,4	26,6
2. Vj.	35,3	34,4	33,3	32,9	37,6	26,8
1992	37,4	37,4	37,0	39,5	39,7	28,9
Feb	38,5	40,2	36,2	38,8	37,6	25,3
Mrz	38,1	33,1	38,1	35,6	38,3	27,7
Apr	38,4	33,0	38,2	34,6	39,1	24,4
Mai	37,0	34,6	36,4	34,8	39,0	22,3
Jun	37,4	32,0	37,4	33,9	37,2	23,6
Jul	36,3	31,8	35,5	32,9	39,5	24,6
Aug	36,1	34,6	36,1	33,8	39,5	26,8
Sep	35,4	33,2	36,2	32,2	38,3	27,0
Okt	36,6	38,3	36,8	33,0	39,2	26,5
Nov	38,0	38,0	37,1	33,3	38,5	27,6
Dez	39,0	38,2	36,8	32,9	37,4	22,6
1993	35,1	31,6	30,9	32,2	31,7	25,7
Feb	34,4	33,3	29,3	31,3	31,8	26,3
Mrz	34,9	34,2	32,4	31,7	35,5	27,6
Apr	36,6	34,8	33,4	34,0	36,8	27,7
Mai	34,6	34,5	34,8	32,8	38,0	24,0
Jun	34,6	33,8	32,0	32,1	38,2	28,7

*) Gebietskörperschaften, Organisationen ohne Erwerbszweck, Bahn und Post, Straßenbau.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4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11.1 Insgesamt

Zeitraum	Gewerbebeanmeldungen		Gewerbeabmeldungen		Netto- zugänge 1)	Gewerbe- abmeldungen je 100 Anmeldungen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Prozent		
						Anzahl
1990	292 997	.	26 694	.	266 303	9
1991	213 832	-27,0	99 767	273,7	193 230	47
1992	213 832	0,0	120 555	20,8	93 277	56
1990 4. Vj.	85 241	.	14 419	.	70 822	17
1991 1. Vj.	81 060	.	20 257	.	60 803	25
2. Vj.	81 121	.	22 362	.	58 759	28
3. Vj.	69 256	.	27 174	.	42 082	39
4. Vj.	61 560	-27,8	29 974	107,9	31 586	49
1992 1. Vj.	60 565	-25,3	31 247	54,3	29 318	52
2. Vj.	55 446	-31,7	30 460	36,2	24 986	55
3. Vj.	48 323	-30,2	27 637	1,7	20 686	57
4. Vj.	49 498	-19,6	31 211	4,1	18 287	63
1993 1. Vj.	50 800	-16,1	32 413	3,7	18 387	64
2. Vj.	49 273	-11,1	28 913	-5,1	20 360	59
1990 Okt	29 366	.	4 162	.	25 204	14
Nov	28 287	.	4 742	.	23 545	17
Dez	27 588	.	5 515	.	22 073	20
1991 Jan	28 349	.	6 438	.	21 911	23
Feb	26 805	.	7 205	.	19 600	27
Mrz	25 906	.	6 614	.	19 292	26
Apr	31 398	.	8 132	.	23 266	26
Mai	24 963	.	6 673	.	18 290	27
Jun	24 760	.	7 557	.	17 203	31
Jul	25 989	.	8 980	.	17 009	35
Aug	21 626	.	8 522	.	13 104	39
Sep	21 641	.	9 672	.	11 969	45
Okt	22 289	-24,1	9 626	131,3	12 663	43
Nov	20 129	-28,8	9 786	106,4	10 343	49
Dez	19 142	-30,6	10 562	91,5	8 580	55
1992 Jan	20 126	-29,0	11 015	71,1	9 111	55
Feb	19 452	-27,4	9 883	37,2	9 569	51
Mrz	20 987	-19,0	10 349	56,5	10 638	49
Apr	19 738	-37,1	10 456	28,6	9 282	53
Mai	17 385	-30,4	9 142	37,0	8 243	53
Jun	18 323	-26,0	10 862	43,7	7 461	59
Jul	17 885	-31,2	9 958	10,9	7 927	56
Aug	13 962	-35,4	8 052	-5,5	5 910	58
Sep	16 476	-23,9	9 627	-0,5	6 849	58
Okt	17 102	-23,3	10 090	4,8	7 012	59
Nov	15 850	-21,3	9 519	-2,7	6 331	60
Dez	16 546	-13,6	11 602	9,8	4 944	70
1993 Jan	15 545	-22,8	11 079	0,6	4 466	71
Feb	16 467	-15,3	10 676	8,0	5 791	65
Mrz	18 788	-10,5	10 658	3,0	8 130	57
Apr	16 683	-15,5	9 807	-6,2	6 876	59
Mai	15 996	-8,0	9 383	2,6	6 613	59
Jun	16 594	-9,4	9 723	-10,5	6 871	59

1) Gewerbebeanmeldungen abzüglich Gewerbeabmeldung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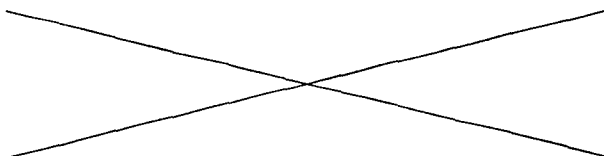
Nummer 145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11.2 Industrie

Zeitraum	Gewerbe- anmeldungen	Gewerbe- abmeldungen	Anteile der Industrie an den gesamten Gewerbe- und -abmeldungen		Netto- zugänge 1)	Gewerbe- abmeldungen je 100 Anmeldungen
	Anzahl		Gewerbe- anmeldungen	Gewerbe- abmeldungen		
			Prozent		Anzahl	
1992	9 804	3 391	4,6	2,8	6 413	35
1992 1. Vj.	2 614	610	4,3	2,0	2 004	23
2. Vj.	2 622	1 172	4,7	3,8	1 450	45
3. Vj.	2 383	800	4,9	2,9	1 583	34
4. Vj.	2 185	809	4,4	2,6	1 376	37
1993 1. Vj.	2 288	735	4,5	2,3	1 553	32
2. Vj.	2 301	749	4,7	2,6	1 552	33
1992 Jan	732	146	3,6	1,3	586	20
Feb	863	217	4,4	2,2	646	25
Mrz	1 019	247	4,9	2,4	772	24
Apr	938	308	4,8	2,9	630	33
Mai	725	291	4,2	3,2	434	40
Jun	959	573	5,2	5,3	386	60
Jul	881	308	4,9	3,1	573	35
Aug	670	243	4,8	3,0	427	36
Sep	832	249	5,0	2,6	583	30
Okt	764	255	4,5	2,5	509	33
Nov	700	275	4,4	2,9	425	39
Dez	721	279	4,4	2,4	442	39
1993 Jan	679	224	4,4	2,0	455	33
Feb	768	234	4,7	2,2	534	30
Mrz	841	277	4,5	2,6	564	33
Apr	797	231	4,8	2,4	566	29
Mai	738	239	4,6	2,5	499	32
Jun	766	279	4,6	2,9	487	36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monat

1993 Jan	-7,2	53,4
Feb	-11,0	7,8
Mrz	-17,5	12,1
Apr	-15,0	-25,0
Mai	1,8	-17,9
Jun	-20,1	-51,3



1) Gewerbeanmeldungen abzüglich Gewerbeabmeldungen.

Nummer 146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11.3 Handwerk

Zeitraum	Gewerbeanmeldungen		Gewerbeabmeldungen		Netto- zugänge 1)	Gewerbe- abmeldungen je 100 Anmeldungen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Prozent	Anzahl	
1990	38 190	.	6 843	.	31 347	18
1991	27 207	-28,8	12 109	77,0	15 098	45
1992	22 304	-18,0	11 011	-9,1	11 293	49
1990 4. Vj.	8 515	.	2 678	.	5 837	31
1991 1. Vj.	7 592	.	3 123	.	4 469	41
2. Vj.	7 034	.	2 607	.	4 427	37
3. Vj.	6 643	.	3 004	.	3 639	45
4. Vj.	5 938	-30,3	3 375	26,0	2 563	57
1992 1. Vj.	6 310	-16,9	3 211	2,8	3 099	51
2. Vj.	6 115	-13,1	2 625	0,7	3 490	43
3. Vj.	4 738	-28,7	2 354	-21,6	2 384	50
4. Vj.	5 141	-13,4	2 821	-16,4	2 320	55
1993 1. Vj.	5 857	-7,2	3 188	-0,7	2 669	54
2. Vj.	5 272	-13,8	2 592	-1,3	2 680	49
1990 Okt	2 982	.	735	.	2 247	25
Nov	2 701	.	758	.	1 943	28
Dez	2 832	.	1 185	.	1 647	42
1991 Jan	2 750	.	1 174	.	1 576	43
Feb	2 446	.	1 063	.	1 383	43
Mrz	2 396	.	886	.	1 510	37
Apr	2 690	.	955	.	1 735	36
Mai	2 217	.	803	.	1 414	36
Jun	2 127	.	849	.	1 278	40
Jul	2 565	.	1 091	.	1 474	43
Aug	2 045	.	925	.	1 120	45
Sep	2 033	.	988	.	1 045	49
Okt	2 068	-30,7	1 041	41,6	1 027	50
Nov	1 932	-28,5	1 040	37,2	892	54
Dez	1 938	-31,6	1 294	9,2	644	67
1992 Jan	2 240	-18,5	1 352	15,2	888	60
Feb	1 993	-18,5	924	-13,1	1 069	46
Mrz	2 077	-13,3	935	5,5	1 142	45
Apr	2 208	-17,9	952	-0,3	1 256	43
Mai	2 004	-9,6	927	15,4	1 077	46
Jun	1 903	-10,5	746	-12,1	1 157	39
Jul	1 735	-32,4	833	-23,6	902	48
Aug	1 375	-32,8	650	-29,7	725	47
Sep	1 628	-19,9	871	-11,8	757	54
Okt	1 800	-13,0	914	-12,2	886	51
Nov	1 568	-18,8	805	-22,6	763	51
Dez	1 773	-8,5	1 102	-14,8	671	62
1993 Jan	1 719	-23,3	1 105	-18,3	614	64
Feb	1 871	-6,1	1 060	14,7	811	57
Mrz	2 267	9,1	1 023	9,4	1 244	45
Apr	1 882	-14,8	926	-2,7	956	49
Mai	1 623	-19,0	805	-13,2	818	50
Jun	1 767	-7,1	861	15,4	906	49

1) Gewerbeanmeldungen abzüglich Gewerbeabmeldung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7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11.4 Handel und Gaststätten

Zeitraum	Gewerbeanmeldungen		Gewerbeabmeldungen		Netto- zugänge 1)	Gewerbe- abmeldungen je 100 Anmeldungen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Anzah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Prozent		
						Anzahl
1990	136 878	.	12 455	.	124 423	9
1991	138 009	0,8	48 091	286,1	89 918	35
1992	97 654	-29,2	61 783	28,5	35 871	63
1990 4. Vj.	38 990	.	7 225	.	31 765	19
1991 1. Vj.	37 602	.	9 637	.	27 965	26
2. Vj.	41 019	.	11 016	.	30 003	27
3. Vj.	31 975	.	13 063	.	18 912	41
4. Vj.	27 413	-29,7	14 375	99,0	13 038	52
1992 1. Vj.	27 283	-27,4	15 927	65,3	11 356	58
2. Vj.	25 594	-37,6	15 550	41,2	10 044	61
3. Vj.	22 441	-29,8	14 159	8,4	8 282	63
4. Vj.	22 336	-18,5	16 147	12,3	6 189	72
1993 1. Vj.	22 228	-18,5	16 226	1,9	6 002	73
2. Vj.	22 430	-12,4	14 924	-4,0	7 506	67
1990 Okt	13 943	.	2 159	.	11 784	15
Nov	13 242	.	2 436	.	10 806	18
Dez	11 805	.	2 630	.	9 175	22
1991 Jan	12 383	.	3 064	.	9 319	25
Feb	12 409	.	3 544	.	8 865	29
Mrz	12 810	.	3 029	.	9 781	24
Apr	16 097	.	4 025	.	12 072	25
Mai	12 545	.	3 371	.	9 174	27
Jun	12 377	.	3 620	.	8 757	29
Jul	12 045	.	4 212	.	7 833	35
Aug	10 173	.	4 133	.	6 040	41
Sep	9 757	.	4 718	.	5 039	48
Okt	9 880	-29,1	4 736	119,4	5 144	48
Nov	8 967	-32,3	4 608	89,2	4 359	51
Dez	8 566	-27,4	5 031	91,3	3 535	59
1992 Jan	8 938	-27,8	5 560	81,5	3 378	62
Feb	8 771	-29,3	5 086	43,5	3 685	58
Mrz	9 574	-25,3	5 281	74,3	4 293	55
Apr	9 097	-43,5	5 238	30,1	3 859	58
Mai	8 095	-35,5	4 586	36,0	3 509	57
Jun	8 402	-32,1	5 726	58,2	2 676	68
Jul	8 335	-30,8	5 005	18,8	3 330	60
Aug	6 510	-36,0	4 148	0,4	2 362	64
Sep	7 596	-22,1	5 006	6,1	2 590	66
Okt	7 780	-21,3	5 311	12,1	2 469	68
Nov	7 222	-19,5	4 953	7,5	2 269	69
Dez	7 334	-14,4	5 883	16,9	1 451	80
1993 Jan	6 882	-23,0	5 593	0,6	1 289	81
Feb	7 177	-18,2	5 261	3,4	1 916	73
Mrz	8 169	-14,7	5 372	1,7	2 797	66
Apr	7 436	-18,3	5 003	-4,5	2 433	67
Mai	7 342	-9,3	4 873	6,3	2 469	66
Jun	7 652	-8,9	5 048	-11,8	2 604	66

1) Gewerbeanmeldungen abzüglich Gewerbeabmeldung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8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11.5 Gewerbeanmeldungen nach Ländern *)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Anzahl						
1990	48 865	30 402	77 668	47 991	52 480	23 690
1991	49 367	32 264	91 992	45 061	51 881	22 432
1992	35 539	22 860	63 457	36 336	37 071	18 569
1990 4. Vj.	14 060	8 926	25 445	14 095	15 765	6 950
1991 1. Vj.	15 314	7 925	24 421	12 612	15 222	5 566
2. Vj.	13 842	9 119	25 638	12 463	14 057	6 002
3. Vj.	9 849	7 585	23 136	10 608	11 919	6 159
4. Vj.	10 362	7 635	18 797	9 378	10 683	4 705
1992 Jan	3 545	1 397	6 264	3 455	2 811	2 654
Feb	3 323	2 245	5 729	3 126	3 398	1 631
Mrz	3 430	2 334	6 129	3 699	3 527	1 868
Apr	3 092	1 890	5 844	3 151	4 332	1 429
Mai	2 704	2 280	5 201	3 122	2 873	1 205
Jun	3 136	2 152	5 604	3 074	2 920	1 437
Jul	2 803	1 984	5 387	3 038	3 689	984
Aug	2 464	1 335	3 895	2 896	2 291	1 081
Sep	2 570	2 147	5 163	2 724	2 742	1 130
Okt	2 776	1 849	5 045	2 636	3 023	1 773
Nov	2 542	1 553	4 725	2 955	2 439	1 636
Dez	3 154	1 694	4 471	2 460	3 026	1 741
1993 Jan	2 517	1 723	3 850	2 968	2 537	1 950
Feb	2 663	1 721	4 837	2 850	2 712	1 684
Mrz	3 041	2 052	5 064	3 237	3 258	2 136
Apr	2 616	1 824	4 768	2 598	2 938	1 939
Mai	2 259	1 741	5 011	2 789	2 598	1 598
Jun	2 631	1 666	4 943	2 524	2 961	1 869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monat						
1991 Okt	-16,5	-28,0	-12,4	-38,7	-34,7	-15,8
Nov	-30,2	-36,5	-18,5	-28,8	-33,2	-38,1
Dez	-32,5	18,6	-43,9	-31,6	-28,0	-42,8
1992 Jan	-15,6	-48,7	-29,4	-32,4	-47,0	24,1
Feb	-51,4	22,3	-34,1	-11,3	-26,3	25,0
Mrz	-19,9	-30,7	-10,5	-6,9	-33,6	-12,0
Apr	-46,8	-43,0	-46,0	-22,3	-16,1	-36,1
Mai	-36,1	-19,3	-36,1	-21,2	-34,7	-14,8
Jun	-17,4	-27,8	-16,2	-30,9	-35,1	-38,9
Jul	-19,4	-25,1	-36,8	-28,8	-16,0	-63,2
Aug	-25,9	-46,7	-46,4	-16,0	-35,0	-30,7
Sep	-15,6	-11,7	-29,7	-5,9	-31,5	-41,2
Okt	-29,3	-13,7	-30,4	-21,1	-19,0	-6,6
Nov	-31,1	-14,2	-23,0	-8,7	-33,1	1,4
Dez	14,9	-54,0	-17,4	-12,2	-8,4	45,9
1993 Jan	-29,0	23,3	-38,5	-14,1	-9,7	-26,5
Feb	-19,9	-23,3	-15,6	-8,8	-20,2	3,2
Mrz	-11,3	-12,1	-17,4	-12,5	-7,6	14,3
Apr	-15,4	-3,5	-18,4	-17,5	-32,2	35,7
Mai	-16,5	-23,6	-3,7	-10,7	-9,6	32,6
Jun	-16,1	-22,6	-11,8	-17,9	1,4	30,1

*) Die Angaben sind vorläufig. Sie können durch Nachmeldungen bzw. Neuordnungen seitens der Gewerbeämter nachträglich in den Statistischen Landesämtern korrigiert werden. Daher sind geringe Abweichungen zu deren Veröffentlichungen möglich.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49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11.6 Gewerbeabmeldungen nach Ländern *)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Anzahl						
1990	4 593	2 833	7 578	4 862	4 987	1 841
1991	17 648	11 067	30 788	15 504	18 523	6 237
1992	20 742	12 144	36 496	19 631	22 144	9 398
1990 4. Vj.	2 793	1 576	3 824	2 549	2 697	980
1991 1. Vj.	3 733	2 279	5 563	3 319	4 047	1 316
2. Vj.	3 921	2 472	6 915	3 360	4 212	1 482
3. Vj.	4 650	2 703	8 608	4 314	4 923	1 976
4. Vj.	5 344	3 613	9 702	4 511	5 341	1 463
1992 Jan	1 971	939	3 444	1 837	1 851	973
Feb	1 715	992	2 796	1 513	1 969	898
Mrz	1 680	1 136	3 425	1 624	1 640	844
Apr	1 598	981	3 078	1 467	2 491	841
Mai	1 669	908	2 799	1 492	1 634	640
Jun	2 367	1 048	3 401	1 650	1 656	740
Jul	1 655	986	2 930	1 615	2 175	597
Aug	1 402	727	2 181	1 765	1 284	693
Sep	1 493	1 090	2 875	1 833	1 663	673
Okt	1 623	1 121	2 907	1 581	2 042	816
Nov	1 389	989	3 198	1 609	1 535	799
Dez	2 180	1 227	3 462	1 645	2 204	884
1993 Jan	1 799	1 207	2 825	2 149	2 107	992
Feb	1 816	1 013	3 249	1 810	1 818	970
Mrz	1 738	1 165	3 048	1 791	2 050	866
Apr	1 421	932	2 807	1 650	2 023	974
Mai	1 344	828	2 917	1 840	1 806	648
Jun	1 568	1 129	2 709	1 684	1 829	804
Prozent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monat						
1991 Okt	171,7	89,5	177,0	95,2	121,8	59,7
Nov	68,5	76,3	159,9	91,7	108,3	98,2
Dez	60,3	195,5	131,4	50,1	72,4	-8,8
1992 Jan	124,2	31,9	79,1	58,0	35,8	144,5
Feb	1,7	60,8	35,3	35,1	46,7	140,1
Mrz	43,8	19,6	117,6	56,8	22,2	55,1
Apr	-0,2	14,7	15,6	40,1	82,2	40,2
Mai	45,6	27,0	27,7	34,4	32,4	131,9
Jun	101,6	16,2	65,0	37,2	2,8	22,1
Jul	24,2	20,0	-1,2	9,5	21,8	-0,2
Aug	-17,7	-17,8	-17,6	25,9	-0,9	17,7
Sep	-7,5	9,3	-3,9	27,6	-9,7	-14,7
Okt	-14,5	19,0	-4,0	2,0	18,2	70,4
Nov	-23,8	29,3	-1,2	6,8	-13,7	18,5
Dez	34,4	-35,6	0,8	13,1	20,2	185,2
1993 Jan	-8,7	28,5	-18,0	17,0	13,8	2,0
Feb	5,9	2,1	16,2	19,6	-7,7	8,0
Mrz	3,5	2,6	-11,0	10,3	25,0	2,6
Apr	-11,1	-5,0	-8,8	12,5	-18,8	15,8
Mai	-19,5	-8,8	4,2	23,3	10,5	1,3
Jun	-33,8	7,7	-20,3	2,1	10,4	8,6

*) Die Angaben sind vorläufig. Sie können durch Nachmeldungen bzw. Neuordnungen seitens der Gewerbeämter nachträglich in den Statistischen Landesämtern korrigiert werden. Daher sind geringe Abweichungen zu deren Veröffentlichungen möglich.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50

11 Gewerbeanzeigen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11.7 Nettozugänge nach Ländern *)

Zeitraum	Brandenburg	Mecklenburg- 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	Berlin-Ost
1990	44 272	27 569	70 090	43 129	47 493	21 849
1991	31 719	21 197	61 204	29 557	33 358	16 195
1992	14 797	10 716	26 961	16 705	14 927	9 171
1990 Okt	4 009	2 476	7 178	4 655	4 932	1 954
Nov	4 204	2 414	6 287	3 760	4 611	2 269
Dez	3 054	2 460	8 156	3 131	3 525	1 747
1991 Jan	3 321	2 009	6 954	3 950	3 937	1 740
Feb	5 148	1 219	6 627	2 405	3 270	931
Mrz	3 112	2 418	5 277	2 938	3 968	1 579
Apr	4 215	2 459	8 154	3 006	3 794	1 638
Mai	3 085	2 111	5 942	2 850	3 164	1 138
Jun	2 621	2 077	4 627	3 247	2 887	1 744
Jul	2 144	1 827	5 561	2 792	2 607	2 078
Aug	1 623	1 621	4 618	2 044	2 227	971
Sep	1 432	1 434	4 349	1 458	2 162	1 134
Okt	2 030	1 200	4 221	1 790	2 003	1 419
Nov	1 864	1 044	2 898	1 728	1 869	940
Dez	1 124	1 778	1 976	1 349	1 470	883
1992 Jan	1 574	458	2 820	1 618	960	1 681
Feb	1 608	1 253	2 933	1 613	1 429	733
Mrz	1 750	1 198	2 704	2 075	1 887	1 024
Apr	1 494	909	2 766	1 684	1 841	588
Mai	1 035	1 372	2 402	1 630	1 239	565
Jun	769	1 104	2 203	1 424	1 264	697
Jul	1 148	998	2 457	1 423	1 514	387
Aug	1 062	608	1 714	1 131	1 007	388
Sep	1 077	1 057	2 288	891	1 079	457
Okt	1 153	728	2 138	1 055	981	957
Nov	1 153	564	1 527	1 346	904	837
Dez	974	467	1 009	815	822	857
1993 Jan	718	516	1 025	819	430	958
Feb	847	708	1 588	1 040	894	714
Mrz	1 303	887	2 016	1 446	1 208	1 270
Apr	1 195	892	1 961	948	915	965
Mai	915	913	2 094	949	792	950
Jun	1 063	537	2 234	840	1 132	1 065

*) Die Angaben sind vorläufig. Sie können durch Nachmeldungen bzw. Neuuzuordnungen seitens der Gewerbeämter nachträglich in den Statistischen Landesämtern korrigiert werden. Daher sind geringe Abweichungen zu deren Veröffentlichungen möglich. - Gewerbeanmeldungen abzüglich Gewerbeabmeldungen.

Nummer 151

12 Handel
12.1 Großhandel
Meßzahlen des Umsatzes und der Beschäftigten

Zeitraum	Umsatz 1)						Beschäftigte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Veränderung gegenüber						Veränderung gegenüber				
	1991 = 100		Vormonat/ Vorquartal		Vorjahreszeitraum		1991 = 100		Vormonat/ Vorquartal		Vorjahreszeitraum
Prozent						Prozent					
1991	100,0	100,0	 	 	.	6,9	100,0	100,0	 	 	.
1992	82,9	98,9	 	 	-17,1	-1,1	57,6	102,5	 	 	-42,4
1991 1.Vj.	112,7	96,6	.	.	.	11,3	104,0	97,8	.	.	.
2.Vj.	103,8	101,8	-7,9	5,4	.	12,4	114,1	99,3	9,7	.	.
3.Vj.	91,2	98,7	-12,1	-3,1	.	4,3	96,7	101,1	-15,2	.	.
4.Vj.	92,3	102,9	1,2	4,3	.	0,7	85,2	101,8	-11,9	.	.
1992 1.Vj.	88,1	98,9	-4,6	3,9	-21,9	2,4	64,3	101,8	-24,5	-38,2	
2.Vj.	81,4	99,9	-7,6	1,0	-21,6	-1,8	59,7	102,3	-7,1	-47,7	
3.Vj.	79,4	96,9	-2,4	-3,0	12,9	-1,8	54,5	103,0	-8,8	-43,7	
4.Vj.	82,9	99,8	4,4	2,9	-10,2	-3,1	52,0	103,0	-4,5	-38,9	
1993 1.Vj.	76,8	91,5	-7,4	-8,3	-12,8	-7,5	42,5	101,5	-18,3	-33,9	
1991 Jan	110,1	97,4	-48,1	3,9	.	19,0	97,5	97,1	-7,0	.	.
Feb	106,2	90,7	-3,5	-6,9	.	11,2	95,5	97,6	-2,1	.	.
Mrz	121,8	101,6	14,7	12,0	.	5,0	119,1	98,6	24,7	.	.
Apr	114,7	104,3	-5,8	2,7	.	18,5	117,4	99,0	-1,4	.	.
Mai	101,4	99,5	-11,6	-4,6	.	4,8	114,3	99,3	-2,6	.	.
Jun	95,2	101,6	-6,1	2,1	.	14,4	110,6	99,7	-3,2	.	.
Jul	95,4	100,2	0,2	-1,4	.	9,2	100,1	100,5	-9,5	.	.
Aug	95,3	94,4	-0,1	-5,8	.	-1,5	97,2	101,2	-2,9	.	.
Sep	83,0	101,4	-12,9	7,4	.	5,5	92,8	101,7	-4,5	.	.
Okt	88,0	109,1	6,0	7,6	-51,9	0,8	87,9	101,7	-5,3	-19,8	
Nov	92,4	102,3	5,0	-6,2	-48,5	-2,0	85,8	101,9	-2,4	-20,4	
Dez	96,5	97,4	4,4	-4,8	-54,5	4,0	81,8	101,7	-4,7	-21,6	
1992 Jan	90,6	95,6	-6,1	-1,8	-17,7	-1,8	65,5	101,4	-19,9	-32,8	
Feb	84,9	94,2	-6,3	-1,5	-20,1	3,9	64,3	101,8	-1,8	-32,7	
Mrz	88,7	106,8	4,5	13,4	-27,2	5,1	63,0	102,2	-2,0	-47,1	
Apr	83,3	101,7	-6,1	-4,8	-27,4	-2,5	60,7	102,4	-3,7	-48,3	
Mai	77,9	96,6	-6,5	-5,0	-23,2	-2,9	60,3	102,2	-0,7	-47,2	
Jun	82,9	101,5	6,4	5,1	13,0	-0,1	58,1	102,4	-3,6	-47,5	
Jul	78,6	98,8	-5,2	-2,7	17,6	-1,4	55,5	102,6	-4,5	-44,6	
Aug	77,4	90,1	-1,5	-8,8	-18,8	4,5	53,9	103,1	-2,9	-44,5	
Sep	82,3	101,9	6,3	13,1	-0,8	0,5	54,0	103,4	0,2	-41,8	
Okt	81,3	102,2	-1,2	0,3	-7,6	6,3	53,0	103,2	-1,9	-39,7	
Nov	78,5	97,8	-3,4	-4,3	-15,0	-4,4	51,8	103,1	-2,3	-39,6	
Dez	88,7	99,3	13,0	1,5	8,0	1,9	51,3	102,7	-1,0	-37,3	
1993 Jan	67,0	81,5	-24,5	-17,9	26,0	-14,7	42,8	101,4	-16,6	-34,7	
Feb	78,5	86,8	17,2	6,5	7,5	-7,9	42,5	101,5	-0,7	-33,9	
Mrz	84,9	106,0	8,2	22,1	-4,3	-0,7	42,2	101,7	-0,7	-33,0	
Apr	80,1	97,2	-5,7	-8,3	2,1	4,6	41,7	101,4	-1,2	-31,3	
Mai	76,0	91,1	-5,1	-6,3	-2,4	-5,7	41,5	101,3	-0,5	-31,2	

1) In jeweiligen Preisen. Ohne Umsatz-(Mehrwert-)steue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52

12 Handel
12.2 Einzelhandel
Meßzahlen des Umsatzes und der Beschäftigten

Zeitraum	Umsatz 1)						Beschäftigte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Neue Länder und Berlin-Ost			
	1991 = 100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Vorquarta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1991 = 100		Veränderung gegenüber Vormonat/Vorquartal		Veränderung gegenüber Vorjahreszeitraum	
			Prozent		Prozent				Prozent		Prozent	
1991	100,0	100,0	8,7	100,0	100,0			
1992	103,8	101,2	3,8	1,2	69,1	100,1	-30,9	
1991 1.Vj.	96,9	94,5	.	.	.	14,0	120,3	98,8	.	.	.	
2.Vj.	96,5	99,8	-0,4	5,6	.	12,8	102,9	99,3	-14,4	.	.	
3.Vj.	99,7	95,5	3,3	-4,3	.	5,1	92,2	100,3	-10,4	.	.	
4.Vj.	106,9	110,1	7,2	15,3	.	3,2	84,5	101,5	-8,3	.	.	
1992 1.Vj.	92,7	95,6	-13,2	-13,2	-4,3	1,2	70,4	99,8	-16,8	-41,5		
2.Vj.	101,1	99,1	9,0	3,7	4,8	-0,7	70,8	99,7	0,6	-31,2		
3.Vj.	104,1	95,8	3,0	-3,4	4,4	0,2	68,8	99,9	-2,8	-25,3		
4.Vj.	117,3	114,3	12,7	19,4	9,8	3,8	66,3	100,9	-3,6	-21,5		
1993 1.Vj.	96,1	92,6	-18,1	-19,0	3,6	-3,2	65,3	98,8	-1,6	-7,2		
1991 Jan	97,6	92,4	.	-19,2	.	17,1	124,2	98,4	.	.	.	
Feb	92,9	86,7	-4,8	-6,2	.	13,2	121,3	98,8	-2,3	.	.	
Mrz	100,2	104,5	7,9	20,5	.	12,0	115,4	99,3	-4,9	.	.	
Apr	96,7	101,7	-3,5	-2,7	.	15,2	109,4	99,2	-5,2	.	.	
Mai	97,9	100,0	1,2	-1,7	.	9,1	100,8	99,4	-7,9	.	.	
Jun	94,9	97,7	-3,1	-2,3	.	14,4	98,6	99,4	-2,2	.	.	
Jul	102,6	103,6	8,1	6,0	.	11,8	93,4	99,5	-5,3	.	.	
Aug	100,2	91,5	-2,3	-11,7	.	0,8	92,9	100,3	-0,5	.	.	
Sep	96,3	91,5	-3,9	0,0	.	2,6	90,3	101,1	-2,8	.	.	
Okt	101,3	105,8	5,2	15,6	.	5,4	85,9	101,5	-4,9	.	.	
Nov	103,4	106,5	2,1	0,7	.	2,1	85,7	101,2	-0,2	.	.	
Dez	115,9	118,1	12,1	10,9	.	2,3	82,0	101,9	-4,3	.	.	
1992 Jan	93,1	94,1	-19,7	-20,3	-4,6	1,8	71,3	99,5	-13,0	-42,6		
Feb	88,4	91,1	-5,0	-3,2	-4,8	5,1	69,6	99,9	-2,4	-42,6		
Mrz	96,7	101,7	9,4	11,6	-3,5	-2,7	70,2	100,0	0,9	-39,2		
Apr	103,3	103,4	6,8	1,7	6,8	1,7	71,0	99,8	1,1	-35,1		
Mai	99,1	97,9	-4,1	-5,3	1,2	-2,1	71,0	99,8	0,0	-29,6		
Jun	100,9	96,1	1,8	-1,8	6,3	-1,6	70,4	99,4	-0,8	-28,6		
Jul	107,6	101,3	6,6	5,4	4,9	-2,2	69,1	99,3	-1,8	-26,0		
Aug	101,4	88,8	-5,8	-12,3	1,2	-3,0	69,0	100,0	-0,1	-25,7		
Sep	103,3	97,2	1,9	9,5	7,3	6,2	68,4	100,4	-0,9	-24,3		
Okt	109,5	107,0	6,0	10,1	8,1	1,1	66,9	100,6	-2,2	-22,1		
Nov	108,5	105,9	-0,9	-1,0	4,9	-0,6	66,2	100,9	-1,0	-22,8		
Dez	134,0	130,1	23,5	22,9	15,6	10,2	65,9	101,1	-0,5	-19,6		
1993 Jan	92,9	86,7	-30,7	-33,4	-0,2	-7,9	67,9	99,0	3,0	-4,8		
Feb	90,6	85,8	-2,5	-1,0	2,5	-5,8	64,7	98,6	-4,7	-7,0		
Mrz	104,8	105,3	15,7	22,7	8,4	3,5	63,2	98,9	-2,3	-10,0		
Apr	...	104,1	...	-1,1	...	0,7	...	99,0		

1) In jeweiligen Preisen.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53

13 Energiewirtschaft

13.1 Index der Nettoproduktion der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gebiet	Deutschland	
	2. Halbjahr 1990	1985	2. Halbjahr 1990	Veränderung gegenüber						
	= 100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0 D	.	111,8	.	/						.
1991 D	103,2	114,8	104,1	/						.
1992 D	96,7	115,8	103,6	/						-0,5
1990 4. Vj.	102,6	124,0	111,3	.	27,7	.	.	2,2	.	
1991 1. Vj.	122,0	128,5	116,6	19,0	3,6	4,7	.	3,2	.	
2. Vj.	93,6	107,7	97,3	-23,3	-16,2	-16,5	.	6,2	.	
3. Vj.	93,2	96,3	88,3	-0,5	-10,6	-9,3	.	-0,9	.	
4. Vj.	104,1	126,7	114,0	11,7	31,5	29,2	1,5	2,1	2,4	
1992 1. Vj.	101,6	132,1	117,4	-2,4	4,3	3,0	-16,7	2,8	0,7	
2. Vj.	87,7	105,7	94,8	-13,7	-20,0	-19,3	-6,3	-1,8	-2,6	
3. Vj.	93,0	99,3	90,0	6,1	-6,1	-5,1	-0,2	3,1	1,9	
4. Vj.	104,7	126,0	112,3	12,5	26,8	24,8	0,6	-0,6	-1,5	
1993 1. Vj.	106,0	129,6	115,4	1,2	2,9	2,8	4,3	-1,9	-1,7	
2. Vj.	93,6	101,8	91,6	-11,7	-21,5	-20,6	6,7	-3,7	-3,4	
1990 Okt	92,7	116,3	103,2	-14,7	12,5	9,7	.	2,0	.	
Nov	102,8	124,3	111,1	10,9	6,9	7,7	.	2,3	.	
Dez	112,2	131,5	119,7	9,1	5,8	7,7	.	2,3	.	
1991 Jan	130,3	134,6	122,3	16,1	2,4	2,2	.	-1,6	.	
Feb	116,3	128,1	116,1	-10,7	-4,8	-5,1	.	10,0	.	
Mrz	119,5	122,9	111,4	2,8	-4,1	-4,0	.	2,2	.	
Apr	93,4	112,5	101,4	-21,8	-8,5	-9,0	.	3,4	.	
Mai	97,8	109,4	99,0	4,7	-2,8	-2,4	.	8,9	.	
Jun	89,7	101,2	91,6	-8,3	-7,5	-7,5	.	6,5	.	
Jul	90,9	95,3	87,3	1,3	-5,8	-4,7	-0,3	1,7	1,6	
Aug	89,5	92,3	84,7	-1,5	-3,1	-3,0	-3,3	-2,2	-1,7	
Sep	99,1	101,4	92,8	10,7	9,9	9,6	-8,8	-1,9	-1,4	
Okt	95,3	120,0	107,0	-3,8	18,3	15,3	2,8	3,2	3,7	
Nov	102,6	127,5	114,2	7,7	6,3	6,7	-0,2	2,6	2,8	
Dez	114,4	132,6	120,8	11,5	4,0	5,8	2,0	0,8	0,9	
1992 Jan	109,8	139,5	124,3	-4,0	5,2	2,9	-15,7	3,6	1,6	
Feb	98,1	127,1	112,9	-10,7	-8,9	-9,2	-15,6	-0,8	-2,8	
Mrz	96,8	129,7	115,0	-1,3	2,0	1,9	-19,0	5,5	3,2	
Apr	92,5	115,5	102,9	-4,4	-10,9	-10,5	-1,0	2,7	1,5	
Mai	87,4	103,9	93,4	-5,5	-10,0	-9,2	-10,6	-5,0	-5,7	
Jun	83,1	97,8	88,0	-4,9	-5,9	-5,8	-7,4	-3,4	-3,9	
Jul	89,1	98,5	88,9	7,2	0,7	1,0	-2,0	3,4	1,8	
Aug	93,2	94,7	86,4	4,6	-3,9	-2,8	4,1	2,6	2,0	
Sep	96,7	104,8	94,6	3,8	10,7	9,5	-2,4	3,4	1,9	
Okt	101,4	123,5	110,3	4,9	17,8	16,6	6,4	2,9	3,1	
Nov	105,4	125,8	111,9	3,9	1,9	1,5	2,7	-1,3	-2,0	
Dez	107,2	128,7	114,7	1,7	2,3	2,5	-6,3	-2,9	-5,0	
1993 Jan	113,6	133,1	118,9	6,0	3,4	3,7	3,5	-4,6	-4,3	
Feb	103,6	125,8	112,0	-8,8	-5,5	-5,8	5,6	-1,0	-0,8	
Mrz	100,8	129,8	115,3	-2,7	3,2	2,9	4,1	0,1	0,3	
Apr	86,8	109,5	97,8	-13,9	-15,6	-15,2	-6,2	-5,2	-5,0	
Mai	97,9	99,1	89,3	12,8	-9,5	-8,7	12,0	-4,6	-4,4	
Jun	96,0	96,9	87,8	-1,9	-2,2	-1,7	15,5	-0,9	-0,2	

*) Fachliche Unternehmensteile; arbeitstäglich bereinigt.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54

13 Energiewirtschaft
13.2 Beschäftigte in der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Zeitraum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 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 land	Neue Länder und Berlin-Ost	Früheres Bundes- gebiet	Deutsch- land	
	1 000 Personen			Veränderung gegenüber						
				Vorquartal/Vormonat			Vorjahreszeitraum			
Prozent										
1991	1. Vj. D	71	239	310	.	0,1	.	.	0,9	.
	2. Vj. D	69	239	307	-2,7	-0,1	-0,7	.	0,7	.
	3. Vj. D	65	240	305	-5,4	0,7	-0,7	.	1,6	.
	4. Vj. D	61	240	302	-5,4	-0,1	-1,2	.	1,5	.
1992	1. Vj. D	58	239	297	-5,6	-0,6	-1,6	-17,8	-0,1	-4,1
	2. Vj. D	56	239	295	-3,5	-0,0	-0,7	-18,5	-0,0	-4,1
	3. Vj. D	53	240	293	-5,1	0,7	-0,4	-18,2	-0,1	-3,9
	4. Vj. D	54	240	293	1,2	-0,2	0,0	-12,5	-0,2	-2,7
1993	1. Vj. D	51	239	289	-6,1	-0,4	-1,4	-13,0	0,0	-2,5
	2. Vj. D	48	240	288	-4,0	0,3	-0,4	-13,4	0,4	-2,2
1991	Jan	68	239	307	.	0,1	.	.	1,1	.
	Feb	72	239	311	5,7	0,1	1,3	.	0,8	.
	Mrz	71	239	310	-1,7	0,1	-0,3	.	0,8	.
	Apr	69	239	308	-2,3	-0,2	-0,7	.	1,0	.
	Mai	69	238	307	-0,7	-0,1	-0,2	.	1,0	.
	Jun	68	239	307	-1,9	0,1	-0,3	.	0,8	.
	Jul	65	239	304	-4,1	0,3	-0,7	.	0,8	.
	Aug	65	241	306	0,6	0,5	0,5	.	0,5	.
	Sep	65	241	306	-0,8	0,0	-0,2	.	0,5	.
	Okt	63	241	303	-3,3	-0,1	-0,8	.	0,6	.
	Nov	62	240	302	-1,4	-0,2	-0,4	.	0,5	.
	Dez	60	240	300	-2,9	-0,1	-0,7	.	0,6	.
1992	Jan	59	238	297	-2,5	-0,6	-1,0	-14,5	-0,2	-3,3
	Feb	58	239	296	-1,5	0,1	-0,2	-20,3	-0,1	-4,8
	Mrz	58	239	297	0,6	0,2	0,3	-18,5	0,0	-4,2
	Apr	56	239	294	-4,0	-0,2	-0,9	-19,9	0,0	-4,4
	Mai	57	239	295	1,9	-0,1	0,3	-17,7	0,0	-4,0
	Jun	56	239	294	-2,0	0,0	-0,4	-17,9	-0,1	-4,0
	Jul	51	239	290	-8,9	0,3	-1,4	-22,0	-0,1	-4,8
	Aug	54	240	295	7,2	0,4	1,6	-16,8	-0,2	-3,8
	Sep	54	241	296	0,3	0,4	0,4	-15,9	0,2	-3,2
	Okt	54	240	294	-0,8	-0,4	-0,4	-13,7	-0,1	-2,9
	Nov	54	240	294	-0,3	-0,3	-0,3	-12,8	-0,2	-2,7
	Dez	54	239	292	-0,6	-0,3	-0,4	-10,8	-0,3	-2,4
1993	Jan	51	239	289	-5,4	-0,2	-1,2	-13,5	0,0	-2,6
	Feb	50	239	289	-0,4	0,1	-0,0	-12,6	0,1	-2,4
	Mrz	51	239	290	0,3	0,2	0,2	-12,8	-0,0	-2,5
	Apr	49	239	287	-3,7	-0,2	-0,8	-12,5	-0,0	-2,4
	Mai	48	240	289	-0,5	0,7	0,5	-14,6	0,7	-2,2
	Jun	48	240	288	-0,2	-0,2	-0,2	-13,0	0,5	-2,0

*) Betriebe von Unternehmen mit 20 Beschäftigten und mehr.

Quelle: Statistisches Bundesamt

Nummer 155

13 Energiewirtschaft
13.3 Energieverbrauch in den neuen Ländern und Berlin-Ost

Jahr	Energieverbrauch								je Einwohner 3) in GigaJoule
	Insgesamt	Energieträger						Fernwärme	
Steinkohlen 1)		Braunkohlen	Mineralöl	Naturgas	Strom 2)	Kernenergie			

**Primärenergieverbrauch
in Petajoule**

1990	3 300	144	2 260	528	281	23	64	 	205
1991	2 470	101	1 539	607	246	-23	0	 	155
1992 4)	2 187	91	1 187	669	255	-15	0	 	139

Insgesamt = 100

1990	100	4,4	68,5	16,0	8,5	0,7	1,9	 	
1991	100	4,1	62,3	24,6	9,9	-0,9	-	 	
1992 4)	100	4,1	54,3	30,6	11,7	-0,7	-	 	

**Endenergieverbrauch
in Petajoule**

1990	2 010	100	876	355	215	267	 	197	125
1991	1 466	62	451	414	170	187	 	182	92
1992 4)	1 317	50	308	463	161	174	 	161	84

Insgesamt = 100

1990	100	5,0	43,5	17,7	10,7	13,3	 	9,8	
1991	100	4,2	30,8	28,2	11,6	12,8	 	12,4	
1992 4)	100	3,8	23,4	35,2	12,2	13,2	 	12,2	

1) Einschließlich sonstiger nicht genannter Brennstoffe.

2) Beim Primärenergieverbrauch: Wasserkraft und Außenhandelsaldo Strom.

3) Bezogen auf die mittlere Bevölkerung. 1992: Stand 30.6.

4) Vorläufige Angaben.

Nummer 156

Strukturdaten der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 des Beitrittsgebietes

— 1989 —

Gliederung	Betriebe		Beschäftigte		Flächen		Viehbestände		Produktionen	
	Zahl	Anteil in %	1000 Personen	Anteil in %	1000 ha LN	Anteil in %	1000 GV	Anteil in %	Mrd. Mt	Anteil in %
Genossenschaften insgesamt	4 530	52,3	694,9	84,2	5 075	82,2	4 343	74,5	63,8	73,8
darunter:										
Pflanzenproduktion	1 164	13,4	306,9	37,2	4 987	80,8	69	1,2	23,7	27,4
Tierproduktion ..	2 851	32,9	343,6	41,6	73	1,2	4 273	73,3	33,2	38,4
Gärtnerische Produktion	199	2,3	27,6	3,3	15	0,2	1	0,0	1,5	1,7
VEG und volkseigene Betriebe ..	580	6,7	124,8	15,1	464	7,5	971	16,7	14,9	17,2
davon:										
VEG Pflanzenproduktion	152	1,8	46,2	5,6	408	6,6	36	0,6	2,1	2,4
Tierproduktion ..	312	3,6	49,1	6,0	39	0,6	443	7,6	5,1	5,9
Volkseigene Betriebe	116	1,3	29,5	3,0	17	0,3	492	8,4	7,7	8,9
Genossenschaften und volkseigene Landwirtschaft ..	5 110	59,0	819,7	99,3	5 539	89,8	5 314	91,1	78,7	91,0
Private Landwirtschaft einschließlich Kirchengüter	3 558	41,0	5,5	0,7	335	5,4	165	2,8	4,8	5,5
Persönliche Nutzung	(rd.375 000)				297	4,8	351	6,0	2,9	3,4
Landwirtschaft insgesamt	8 668 ¹⁾	100	825,2 ¹⁾	100	6 171	100	5 830	100	86,5	100

Quelle: Statistisches Amt der DDR
Ohne persönliche Nutzung.

Nummer 157

Entwicklung der Ertragslage in den Genossenschaften und Staatsbetrieben der Landwirtschaft
der ehemaligen DDR

Gliederung	1986	1987	1988	1989		
	Mill. Mark				Anteil an den Erlösen insgesamt in %	
Erlöse insgesamt (Bruttoprodukt)	78 494	78 427	77 582	79 805	100,0	
davon aus Pflanzenproduktion	24 482	24 163	23 023	23 928	30,0	
Tierproduktion	43 152	42 643	42 976	43 957	55,0	
sonstiger Produktion ²⁾)	10 860	11 621	11 583	11 920	15,0	
Selbstkosten gesamt	64 162	64 924	66 529	68 188	85,4	
davon Abschreibungen und Wertminderungen	3 325	3 308	3 456	3 701	4,6	
Verbrauch von Material	43 492	43 766	44 624	45 403	56,9	
Verbrauch produktiver Leistungen	5 126	5 373	5 260	5 227	6,5	
persönliche Einkünfte	9 631	9 966	10 239	11 060	13,9	
sonstige Kosten	2 588	2 511	2 950	2 797	3,5	
Ergebnis	14 332	13 503	11 053	11 617	14,6	
Sonstige Unterstützungen für Mitglieder ³⁾) abzüglich Gewinnanteile aus kooperativen Einrichtungen	321	444	516	723	1,0	
Bruttogewinn	14 011	13 059	10 537	10 894	13,6	
Steuern und sonstige Abgaben	5 835	5 410	4 129	4 300	5,4	
Nettogewinn	8 176	7 649	6 408	6 594	8,2	

¹⁾ Berechnet auf der Grundlage der Jahresabschlußberichte (einschließlich kooperative Einrichtungen und ACZ).

²⁾ Erlöse aus Handels-, Verkehrs-, bauwirtschaftlichen u. a. Leistungen.

³⁾ Z.B. Unterstützung der Betriebe bei der Bewirtschaftung der persönlichen Flächen und Hauswirtschaften.

Nummer 158

Überblick über die Schwermetallbelastung der landwirtschaftlichen Nutzflächen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Land	ldw. Nutzfläche	davon untersuchte Fläche		schwermetallbel. Fläche der untersuchten Fläche		potentiell schwermetallbel. Fläche der ldw. Nutzfläche		Länderanteil an der potentiell belasteten Fläche im gesamten Beitrittsgebiet
		ha	%	ha	%	ha	%	
Mecklenburg-Vorpommern	1 676 723	156 866	9	701	0	7 087	0,4	4,8
Brandenburg	1 324 066	99 424	8	725	1	9 410	0,7	6,3
Sachsen	1 068 649	101 143	9	7 098	7	72 862	6,8	49,0
Sachsen-Anhalt	1 291 668	122 020	9	2 227	2	23 510	1,8	15,8
Thüringen	813 788	77 161	9	3 202	4	35 826	4,4	24,1
Gesamt	6 174 894	556 614	9	13 953	3	148 695	2,4	100,0

(Quelle: Datenspeicher Schwermetalluntersuchung Institut für Pflanzenernährung und Ökotoxikologie der AdL - IPEÖ Jena)

Nummer 159**Anteil wind- und wassererosionsgefährdeter Ackerflächen (in % der LF)**

Land	Erosionsgefährdung durch:	
	Wasser	Wind
Mecklenburg-Vorpommern	24,7	40,3
Brandenburg	8,4	56,7
Sachsen	46,6	37,8
Sachsen-Anhalt	23,8	49,4
Thüringen	52,7	15,3
Gesamt	28,2	42,2

(Quelle: Mittelmaßstäbige Standortkartierung - MMK)

Nummer 160**Betriebsstruktur in den neuen Ländern - August 1992
Mit Anpassungshilfen geförderte Betriebe**

Rechtsform	Betriebe		Fläche		Durchschn. Betriebsgröße ha LF
	Zahl	%	1 000 ha LF	%	
Natürliche Personen	19 073	86,2	1490,8	28,4	78,2
davon Einzelunternehmen	17 820	80,6	960,5	18,3	53,9
davon Landwirtschaft	14 138	63,9	940,2	17,9	66,5
darunter Haupterwerb	5 958	26,9	799,0	15,2	134,1
davon Gartenbau	2 561	11,6	6,7	0,1	2,6
davon Sonstige	1 121	5,1	13,7	0,3	12,2
davon Personengesellschaften	1 253	5,7	530,3	10,1	423,2
Juristische Personen	3 041	13,8	3755,8	71,6	1 235,0
davon eingetr. Genossenschaften	1 433	6,5	2180,6	41,6	1 521,7
GmbH	1 183	5,3	1081,5	20,6	914,2
Andere Körperschaften	147	0,7	94,0	1,8	639,6
GmbH & Co.KG	278	1,3	399,7	7,6	1 437,6
Insgesamt	22 114	100,0	5246,5	100,0	237,3

Nummer 161

Struktur- und Erfolgskennzahlen landwirtschaftlicher Unternehmen nach Rechtsformen
in den neuen Ländern

- 1991/92 -

Gliederung	Einheit	Rechtsform		
		Einzel- unternehmen (Vollerwerb)	Personen- gesellschaft	Juristische Person
Zahl der Betriebe		532	37	117
Betriebsgröße	1000 DM StBE	76	290	1 878
Betriebsgröße	ha LF	114 ¹⁾	328 ¹⁾	1 754
Arbeitskräfte	AK/Betrieb	1,80	4,89	69,91
Arbeitskräftebesatz	AK/100 ha LF	1,58 ¹⁾	1,49 ¹⁾	3,96
Viehbesatz	VE/100 ha LF	25,4 ¹⁾	24,3 ¹⁾	74,3
Bilanzvermögen	DM/haLF	5 950 ¹⁾	4 739 ¹⁾	5 499
Eigenkapital	DM/haLF	3 852 ¹⁾	2 318 ¹⁾	2 460
Fremdkapital	DM/haLF	2 061 ¹⁾	2 342 ¹⁾	2 069
Eigenkapitalquote	%	65	49	45
Eigenkapitalveränderung	DM/haLF	517	589	-474
Bruttoinvestitionen	DM/haLF	1 607 ¹⁾	1 619 ¹⁾	461
Unternehmensertrag	DM/ha LF	2 223 ¹⁾	2 519 ¹⁾	3 244
Unternehmensaufwand	DM/ha LF	1 659 ¹⁾	1 973 ¹⁾	3 427 ²⁾
Betriebseinkommen	DM/Betrieb	96 377	330 018	1 785 707
Betriebseinkommen	DM/ha LF	844 ¹⁾	1 005 ¹⁾	1 018
Betriebseinkommen	DM/AK	53 494	67 526	25 544
Gewinn	DM/haLF	564 ¹⁾	546 ¹⁾	- 184
Gewinn plus Fremdlöhne	DM/Unternehmen	72 337	268 411	1 580 481
Gewinn plus Fremdlöhne	DM/ha LF	633 ¹⁾	818 ¹⁾	901
Gewinn plus Fremdlöhne	DM/AK	40 151	54 920	22 608
Unternehmensbezogene Beihilfen in Relation	DM/Unternehmen	44 382	83 733	753 684
zum Gewinn	%	69	47	.
zum Gew.plus Fremdl.	%	61	31	48

¹⁾ LF am Ende des Wirtschaftsjahres.²⁾ Darunter 1085 DM/ha LF für Löhne und Gehälter.

Der Aussagewert der Ergebnisse ist wegen unzureichender Repräsentativität der Testbetriebe und erheblicher Sondereinflüsse in der Aufbau- und Umstrukturierungsphase noch stark eingeschränkt.

Nummer 162**Ausgabenschwerpunkte für Investitionen im Verkehrsbereich
Neue Bundesländer einschließlich Berlin****Mrd. DM**

	2. Hj. 1990	1991	1992	1993
Deutsche Reichsbahn	0,7	5,3	7,0	7,6
Bundesfernstraßen	0,1 ¹⁾	1,9	3,5	3,4
ÖPNV / Kommunaler Straßenbau (GVFG)	1,0	1,9	3,2	1,9
Bundeswasserstraßen	0,1	0,1	0,1	0,2
Summe	1,9	9,2	13,8	13,1

Finanzierungsquel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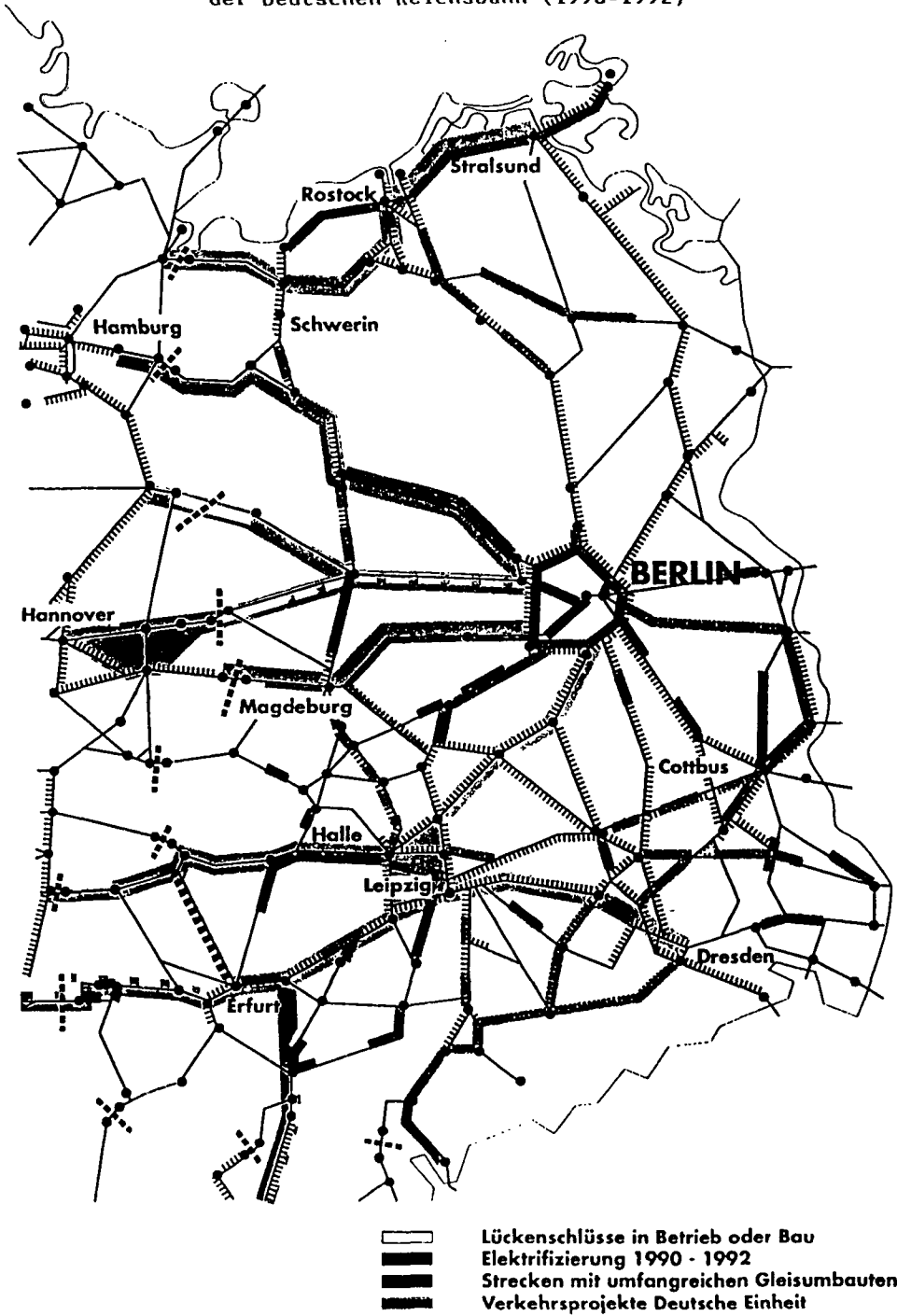
- Einzelplan 12
- Einzelplan 60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1991/92)
- Nachtragshaushalte 1990
- "Projektfond" 1990

1) nur Bundesautobahnen

Quelle: BMV (Juli 1993)

Nummer 163

**Übersicht der Maßnahmen im Streckennetz
der Deutschen Reichsbahn (1990-1992)**



Im Original farbig

Nummer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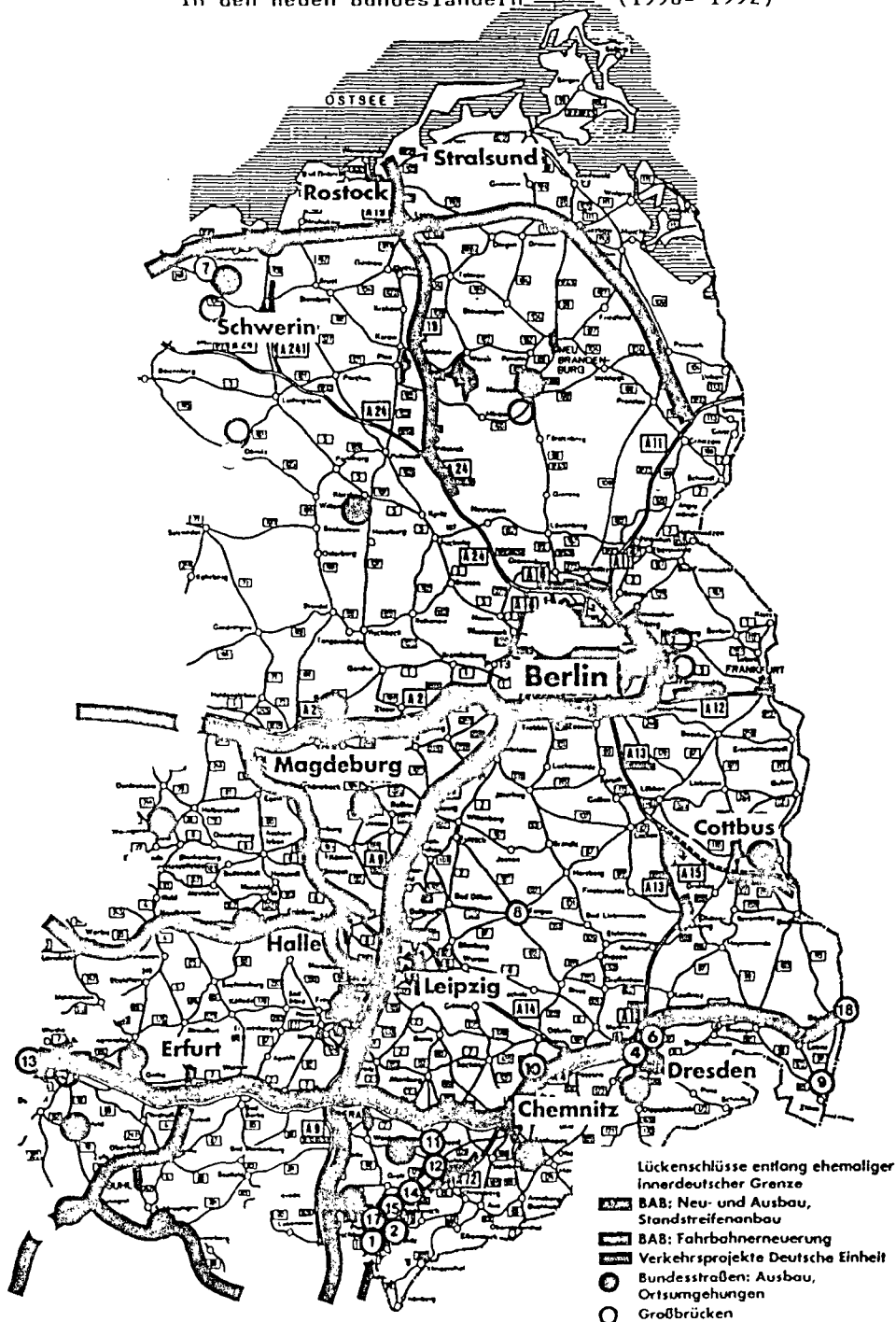
Wichtige Ergebnisse des Bundesfernstraßenbaus
Neue Bundesländer einschließlich Berlin

	1990 - 1992
Bundesautobahnen	
(km Richtungsfahrbahn)	
- Deckenerneuerungen	
+ Zwischenausbau	753 km
+ 4-streifiger Ausbau	134 km
+ 6-streifiger Ausbau	83 km
- Standstreifen Ausbau	183 km
- Anbau 2. Fahrbahn	49 km
- Ausrüstung mit Schutzplanken	
+ Mittelschutzplanken	1514 km
+ Randschutzplanken	765 km
- Brückeninstandsetzungen	228 St.
- Brückenneubauten	53 St.
Bundesstraßen	
- Deckenerneuerungen	3784 km
- Um- und Ausbau	174 km
- Neubau	51 km
- Bau von Lichtsignalanlagen	699 St.
- Ausrüstung mit Schutzplanken	1021 km
- Brückeninstandsetzungen	452 St.
- Brückenneubauten	51 St.

Quelle: BMV (Mai 1993)

Nummer 165

Übersicht der Maßnahmen an Bundesfernstraß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990- 1992)



Im Original farbig

Nummer 166

Entwicklung des Güter- und
Personenverkehr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üterverkehr

Verkehrszweige	Verkehrsaufkommen			Verkehrsleistung				
	Mio. t			Mrd. tkm				
	1989	1990	1991	1992	1989	1990	1991	1992
Eisenbahnen	339,3	221,9	111,8	86,0	59,0	39,8	17,8	13,5
Binnenschifffahrt	20,4	13,6	8,0	8,0	2,3	1,9	1,0	1,0
Straßengüterfernverkehr	27,6	18,0	28,4	55,0	7,0	6,2	8,0	15,5
Straßengüternahverkehr	513,0	350,0	360,0	510,0	9,9	6,8	7,0	10,0
Seeschifffahrt	25,1	17,0	9,9	11,3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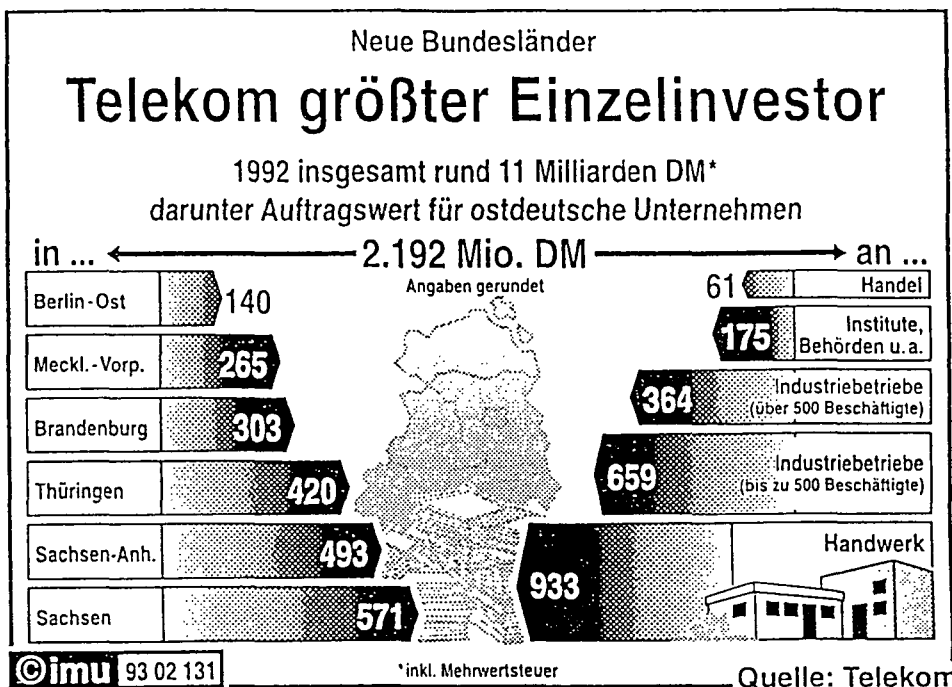
Personenverkehr

Verkehrsarten	Beförderte Personen			Personenkilometer				
	Mio			Mrd				
	1989	1990	1991	1992	1989	1990	1991	1992
Öff. Personenverkehr	4023,0	3275,0	2220,0	1994,0	-	41,9	27,8	25,4
- Eisenbahnverkehr	592,0	471,0	327,0	310,0	23,8	17,5	10,3	9,6
- Straßenverkehr	3429,0	2802,0	1892,0	1682,0	29,1	23,9	17,1	15,2
- Luftverkehr	1,6	1,8	1,3	2,0	-	0,5	0,4	0,6
Individualverkehr	5010,0	5250,0	6280,0	6100,0	84,4	90,0	102,6	99,7

Quelle: DIW (Mai 1993)

1) vorläufige Angaben

Nummer 167



Aufträge für 2,2 Milliarden DM an ostdeutsche Unternehmen

Rund 11 Milliarden DM (inkl. Mehrwertsteuer) investierte die Telekom 1992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war damit einmal mehr größter Einzelinves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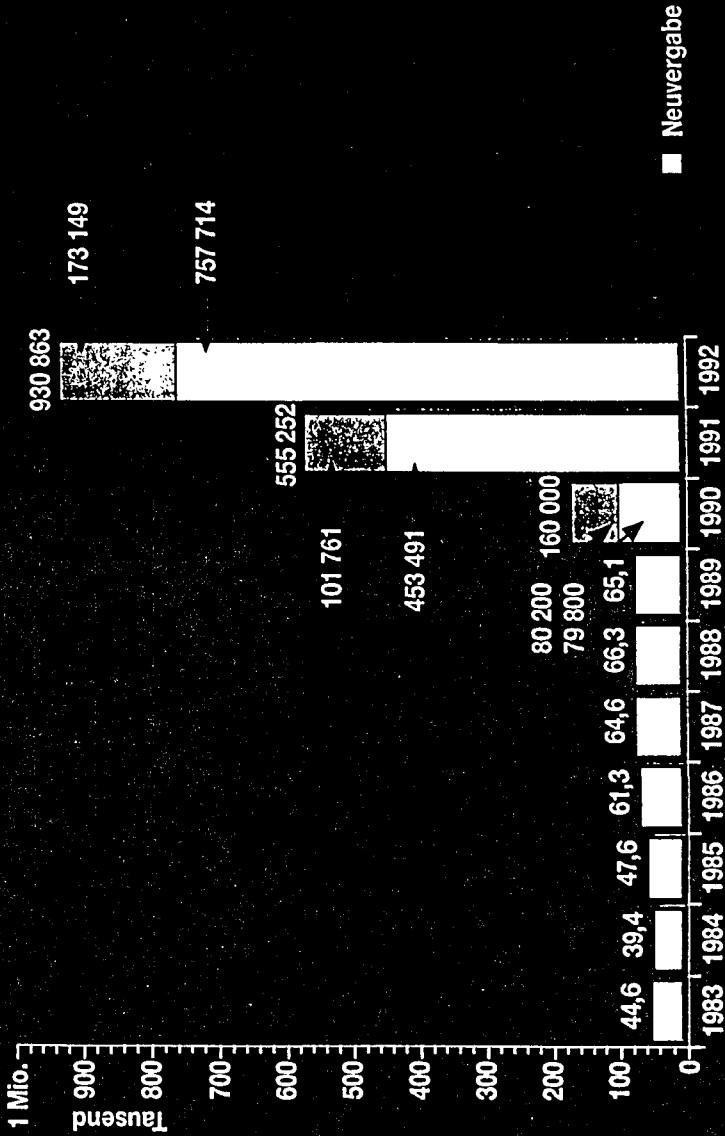
Um den Ausbau der Kommunikationswege zu forcieren, vergab die Telekom Aufträge an Firmen mit Si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m Gesamtwert von fast 2,2 Milliarden DM. Davon erhielten allein Handwerksbetriebe Aufträge über 933 Millionen DM. Das Volumen für Aufträge, die Auftragnehmer der Telekom in die neuen Länder weitergaben, betrug noch einmal rund 2 Milliarden DM.

Für 1993 plant die Telekom Investitionen in den ostdeutschen Länder in annähernd gleicher Höhe wie 1992. Bis 1997 sollen die Investitionsanstrengungen im Rahmen des Gesamtkonzepts „Telekom 2000“ etwa 60 Milliarden DM erreichen.

Quelle: Telekom

Nummer 168

Telefonanschlüsse DDR/neue Bundesländer und Ost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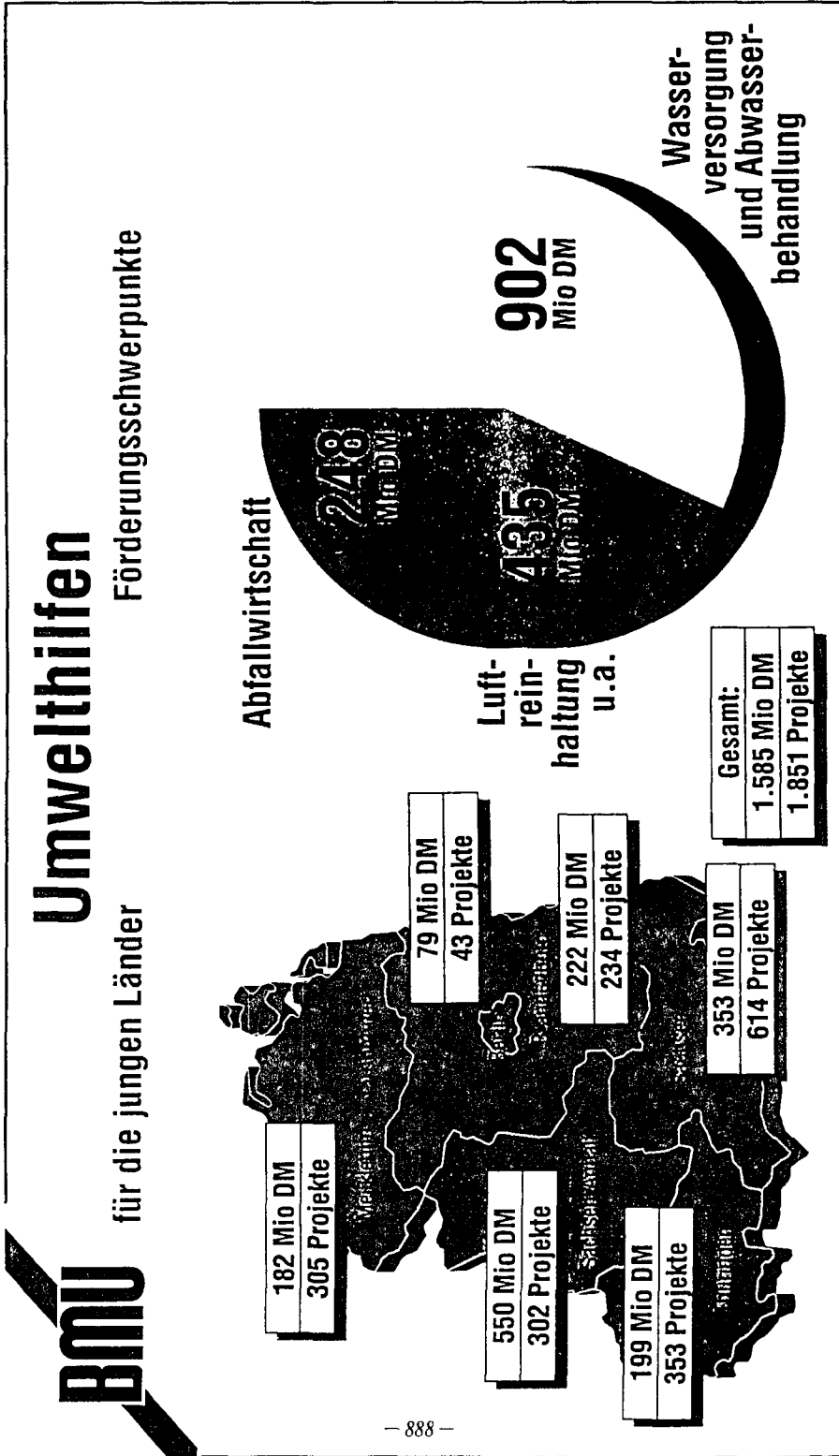
Im Original farbig

Nummer 169

1. Briefverkehr aus den alten in die neuen Länder		
1989		74,4 Millionen
1990		275,5 Millionen
1991		767,3 Millionen
2. In den neuen Ländern eingelieferte Briefsendungen		
1989		1261,3 Millionen
1990		1590,9 Millionen
1991		1692,7 Millionen
3. Briefverkehr aus den neuen in die alten Länder		
1989		129,6 Millionen
1990		277,9 Millionen
1991		277,6 Millionen
4. Frachtverkehr aus den alten in die neuen Länder		
1989		22,5 Millionen
1990		39,2 Millionen
1991		92,9 Millionen
5. In den neuen Ländern eingelieferte Frachtsendungen		
1989		51,9 Millionen
1990		43,0 Millionen
1991		74,4 Millionen
6. Frachtverkehr aus den neuen in die alten Länder		
1989		10,0 Millionen
1990		9,0 Millionen
1991		12,1 Millionen
7. In den neuen Ländern eingelieferte Zeitungen (Abo und Einzelverkauf)		
1989		3840,5 Millionen
1990		2753,1 Millionen
1991		1132,3 Millionen*
8. In den neuen Ländern bearbeitete Zeitungsdrucksachen (1991 eingeführt)		
1991		266,8 Millionen

* Einzelverkauf ab April eingestellt

Nummer 170



Logo of the Federal Environment Ministry (BMU) and the text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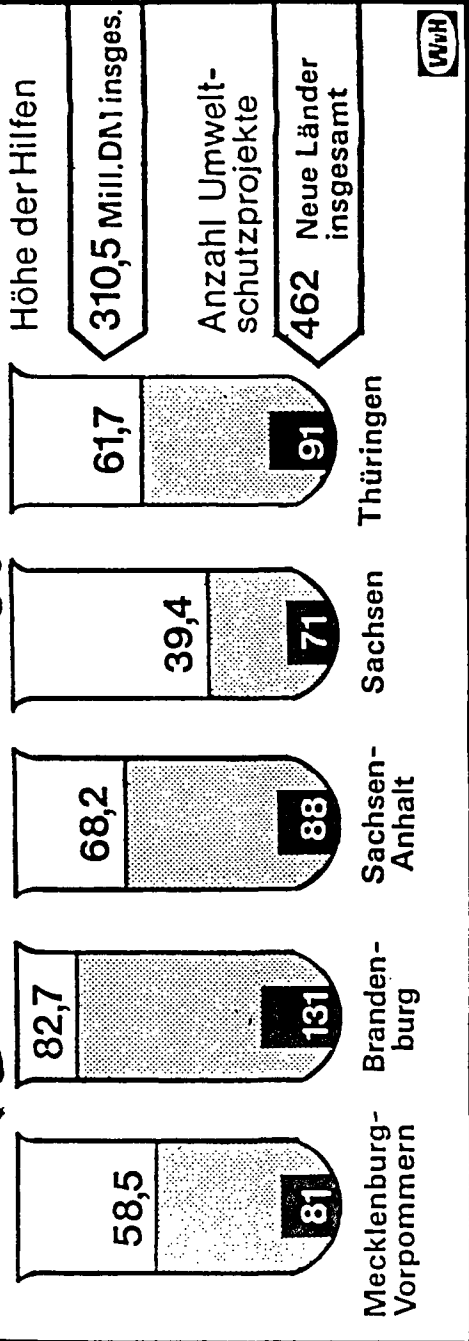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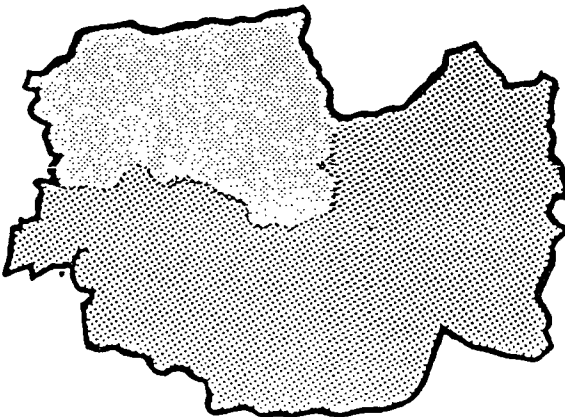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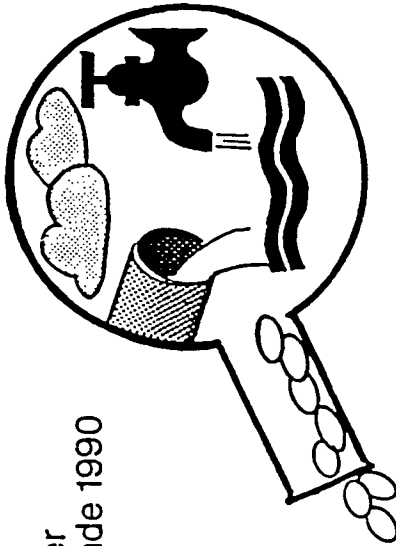
Im Original farbig

Nummer 171 a

Soforthilfen für unsere Umwelt

Umwelt – Soforthilfen in den fünf neuen Bundesländ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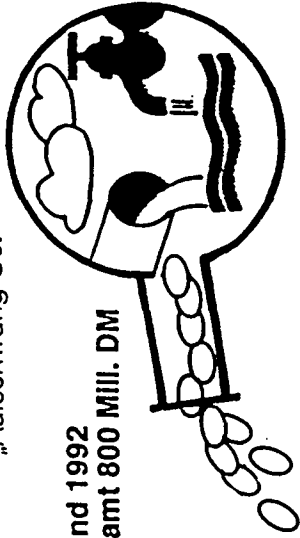
ab 3. Oktober
bis Jahresende 1990
in Mill. 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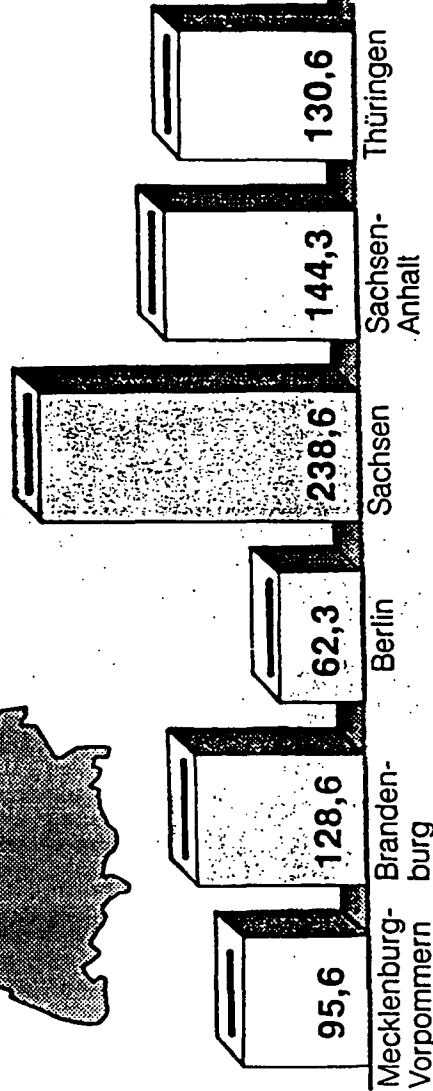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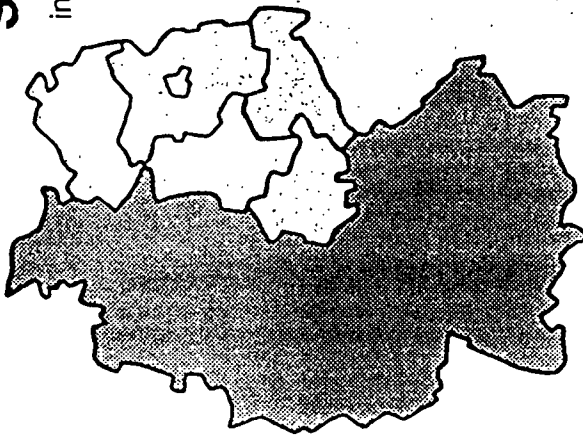
Nummer 171 b

Soforthilfen für die Umwel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schließlich Berlin
aus dem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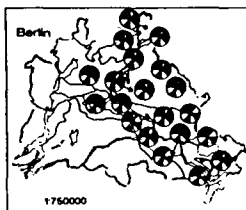
1991 und 1992
insgesamt 800 Mill. DM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Nummer 172a

Grundwasserbelastung durch Schwermetalle und organische Verunreinigungen der DDR (Frühjahr 1990)



K, PO₄, Fe, Mn
 SO₄ Schwermetalle
 CSV-Mn GH, ICH
 NO₂, NO₃, NH₄ CKW, Triazine

□ keine Werte vorhanden
 ◐ als Wert angegeben
 ◑ zur TGA/ZA
 ◒ Belastung als Wert nach
 Grenzwertüberschreitung au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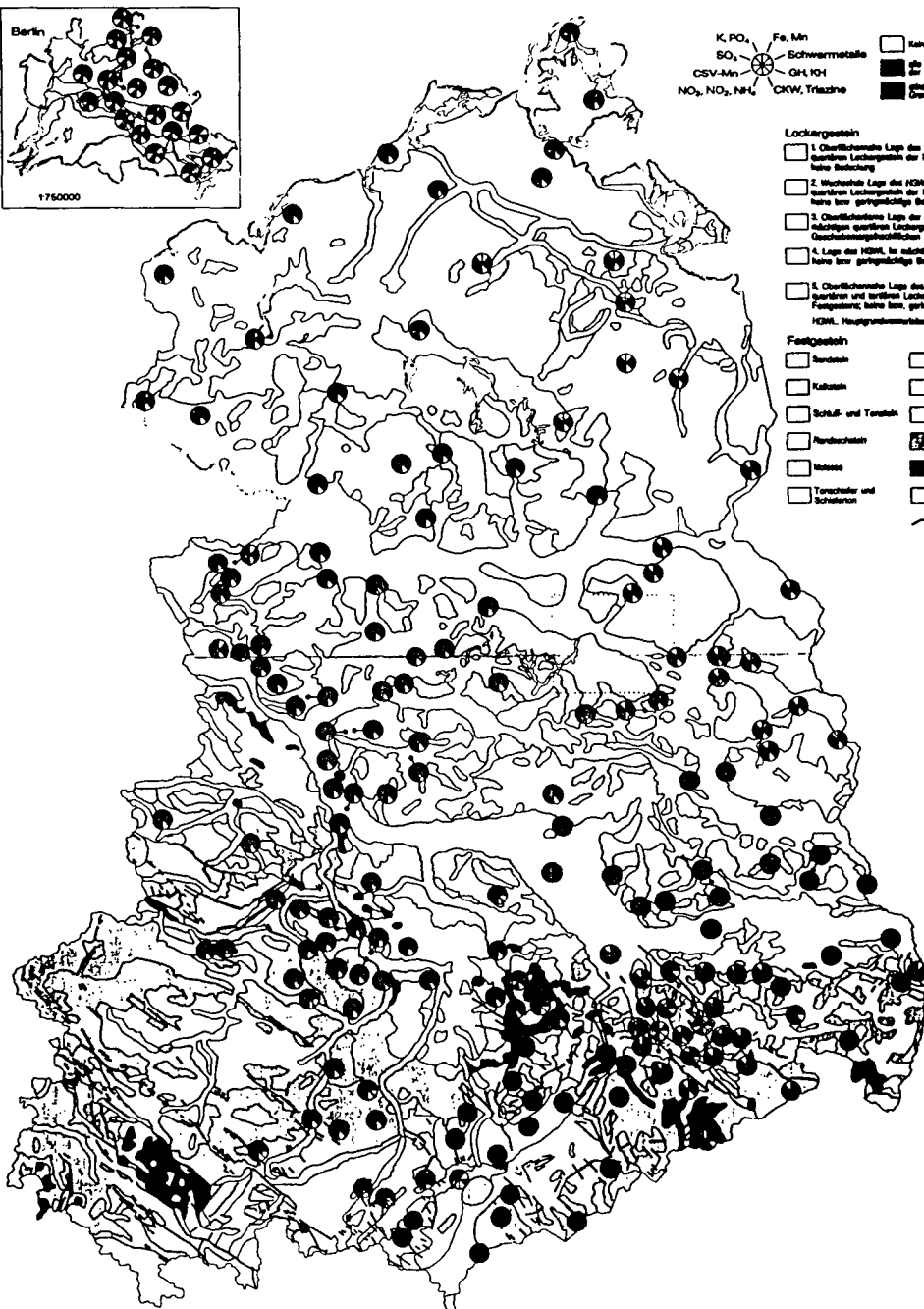
Lockergestein

- 1. Oberflächennahe Lage des HGM, im mächtigen
oberen Lockergestein der Muldenzug,
keine Belastung
- 2. Mächtigkeits Lage des HGM, im mächtigen
oberen Lockergestein der Hochflächen,
keine bzw. geringfügige Belastung
- 3. Oberflächennahe Lage des HGM, im
mächtigen oberem Lockergestein der
Görschengebietsteile
- 4. Lage des HGM, im mächtigen unteren
Lockergestein, keine bzw. geringfügige Belastung
- 5. Oberflächennahe Lage des HGM, im geringfügigen
oberen und unteren Lockergesteinschichtfolge des
Fangens, keine bzw. geringfügige Belastung

HGM: Hauptgrundwasserleiter

Festgestein

- Sandstein
- Kalkstein
- Schiefer- und Tonstein
- Metakonglomerat
- Marmor
- Tonsteine und
Schiefer
- Schiefer
- Flysch
- Granit
- ◐ Magmatische
Gesteine
- ◑ Magmatische
Ergußgesteine
- Metakonglomerat
- Störungszon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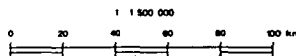
352

Wasser

Umwelt
Methodenbank
Umwelt

Daten zur Umwelt 1990/91
Umweltbundesamt

Quelle: Institut für Wasserwirtschaft der DDR, Gesellschaft für Umwelt- und Wirtschaftsgeologie mb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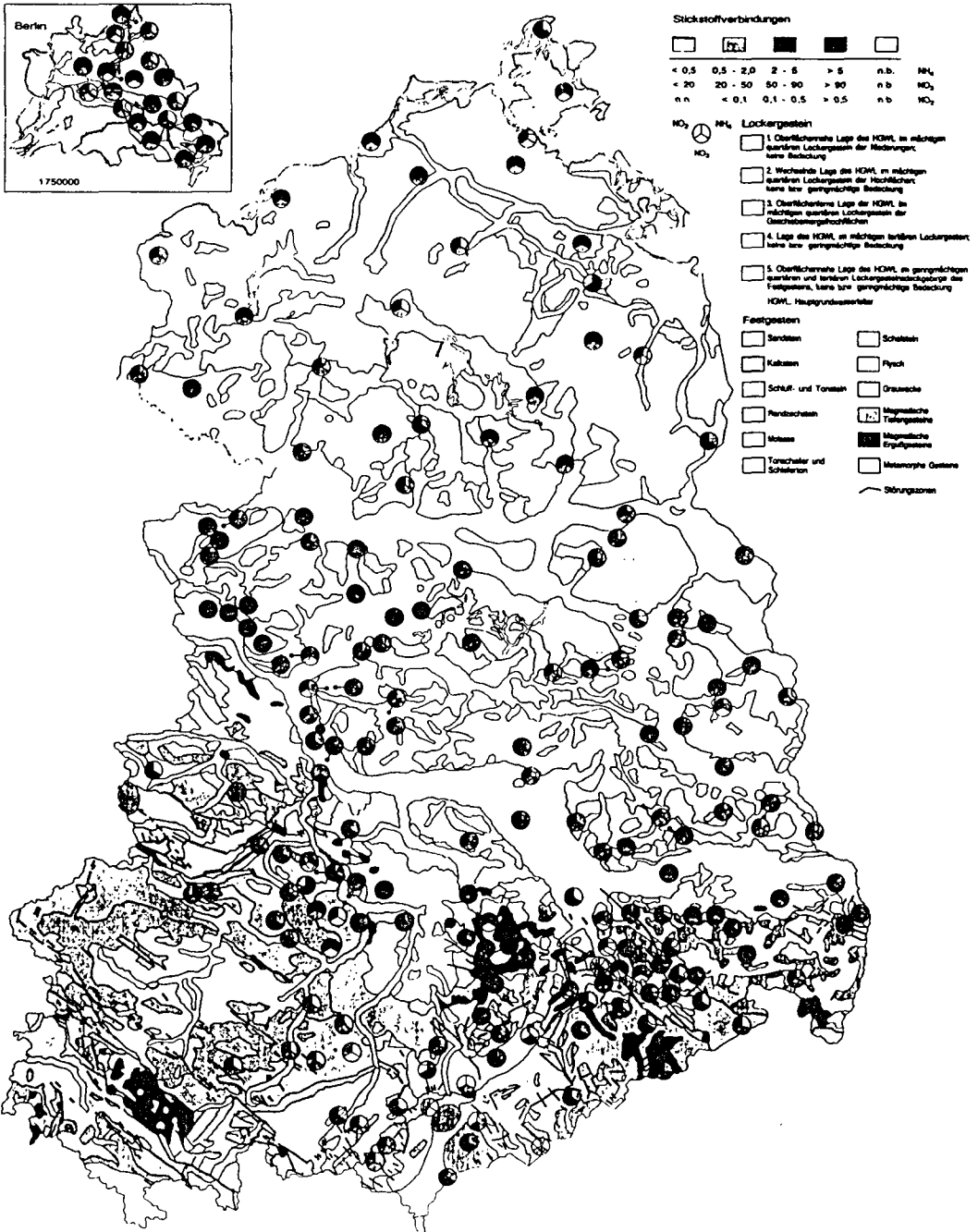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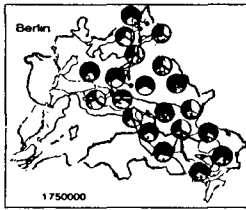
Nummer 172b

Grundwasserbelastung durch Stickstoffverbindungen in der DDR (Frühjahr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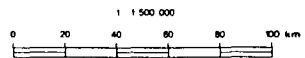
Tafel zur Umwelt 1990/91
Mehrfachdruckentwurf

Umwelt 1990/91
Mehrfachdruckentwurf

353



Quelle: Institut für Wasserwirtschaft der DDR, Gesellschaft für Umwelt- und Wirtschaftsgeologie mbH



Im Original farbig

Nummer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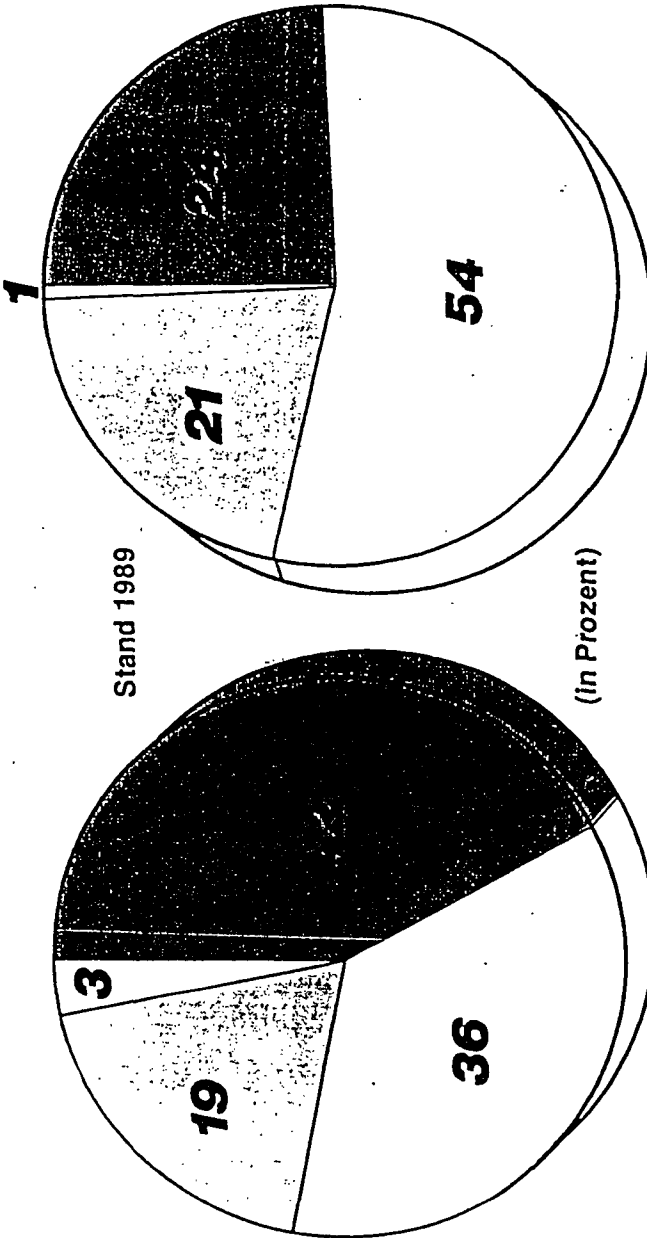
Nummer 174

Belastung von Wasserläufen und stehenden Gewässer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10600 km Wasserläufe

655 Seen und Talsperren



■ stark belastet
▨ mittel belastet

▩ mäßig belastet
□ ökologisch intakt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Nummer 175

Umweltinfrastruktur



Abwasserbehandlung (Anschlußgrad in %)

Privatwirtschaftl. Lösun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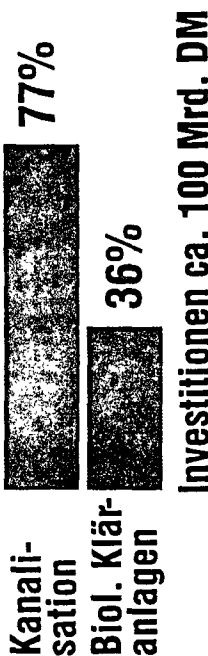
Alte Länder



Vorteile

- Entlastung öffentlicher Haushalte und Verwaltung
- effektivere Planung und schnellere Fertigstellung
- durch Wettbewerb geringere Baukosten und Gebühren

Junge Länder



Investitionen ca. 100 Mrd. D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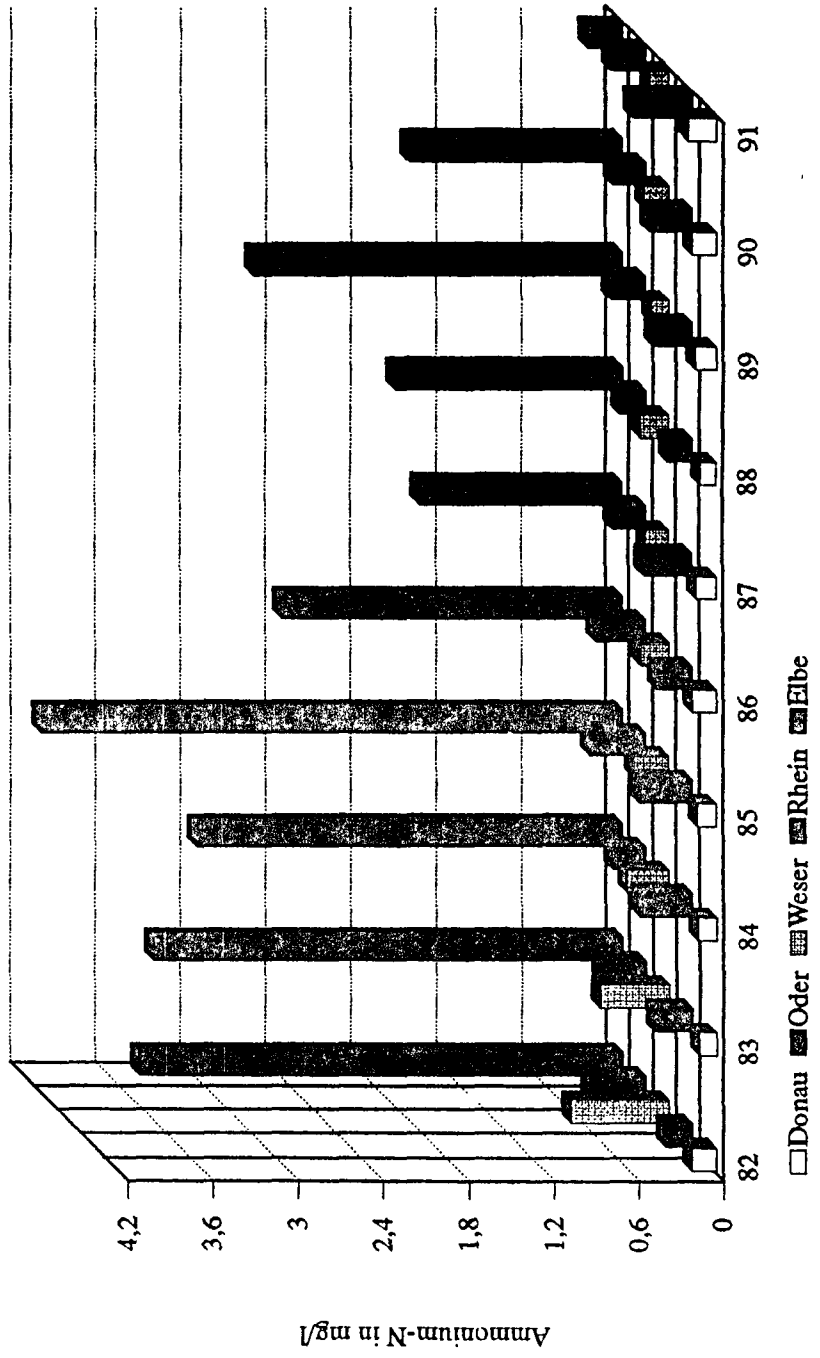
Im Original farbig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ummer 176a

Ammonium-Stickstoff in mg/l, 50-Perzen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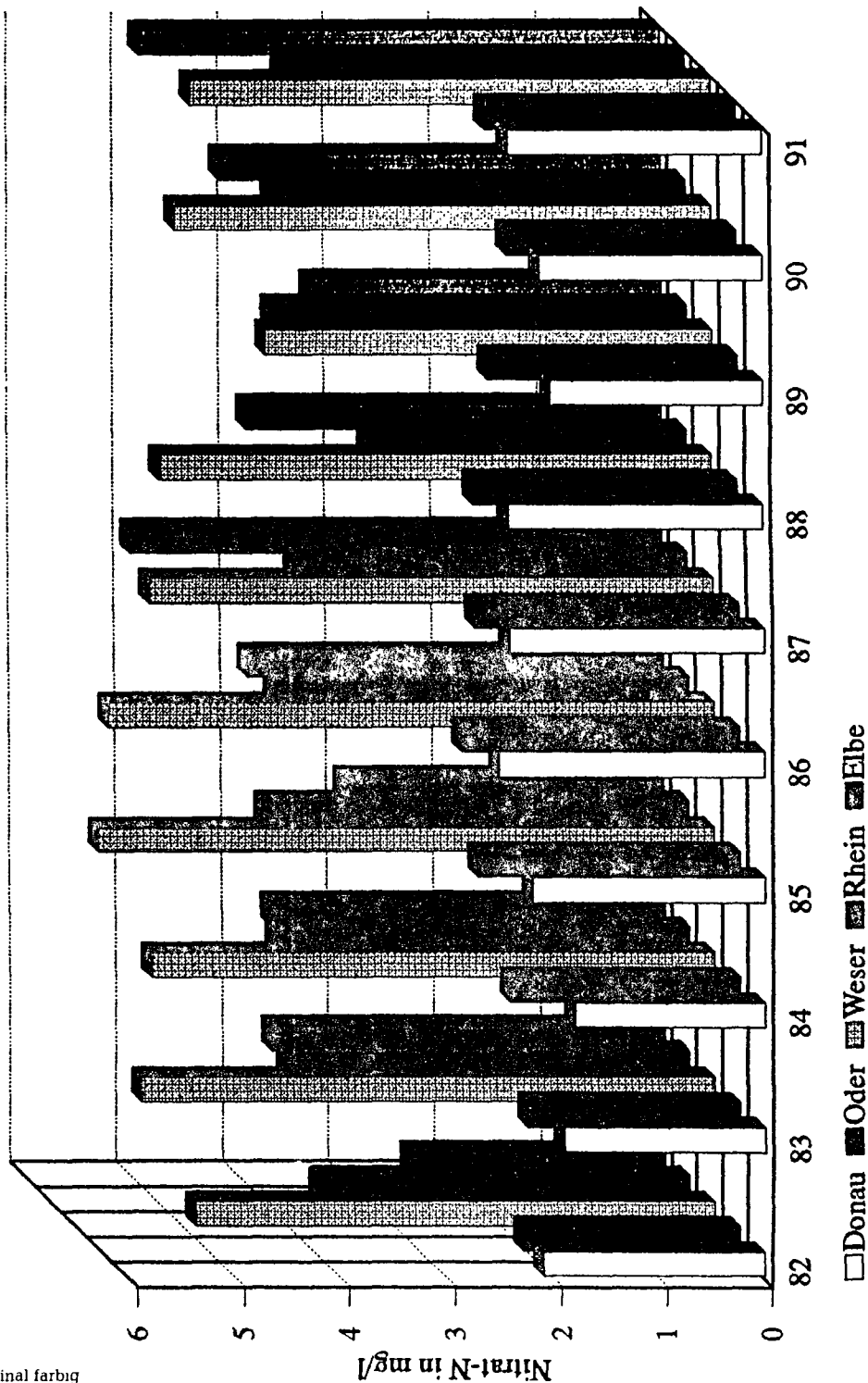


Quelle: LAWA

Im Original farbig

Nummer 176b

Nitrat-Stickstoff in mg/l, 50-Perzent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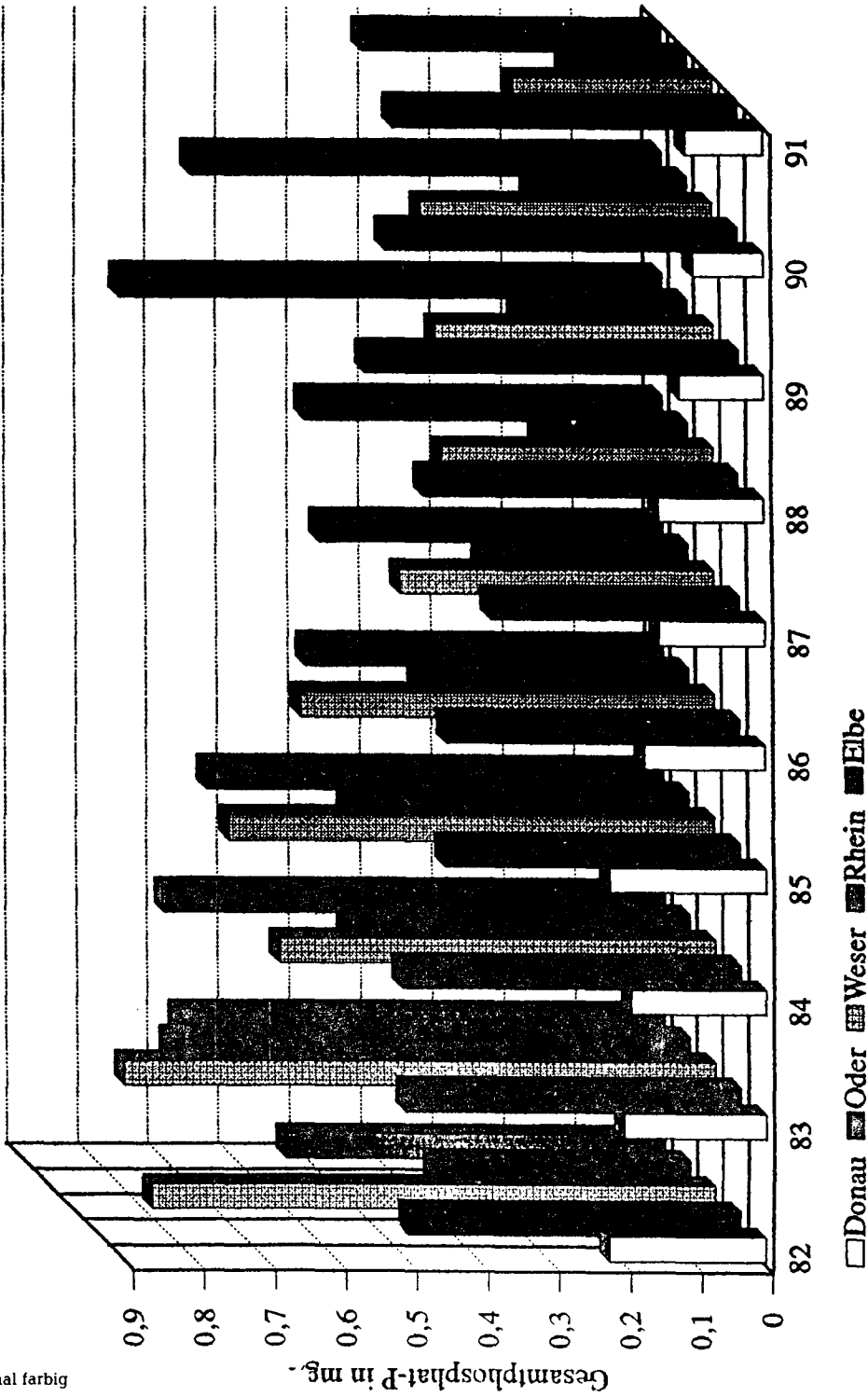


Quelle: LAWA

Im Original farbig

Nummer 176c

Gesamtphoosphat-Phosphor in mg/l, 50-Perzentile



Quelle: L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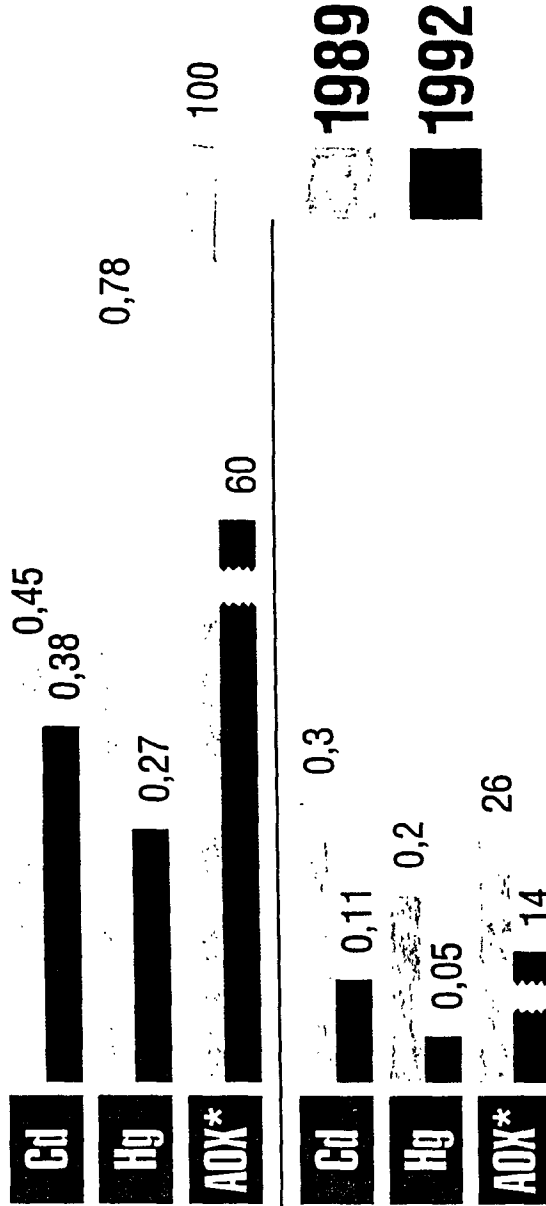
Im Original farbig

Nummer 176 d

Umweltsituation Wasser

Schadstoffbelastung µg/l

BMU



* AOX = Adsorbierbare Organische Halogenverbindungen

Im Original farbig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ummer 177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der Zahl der Depon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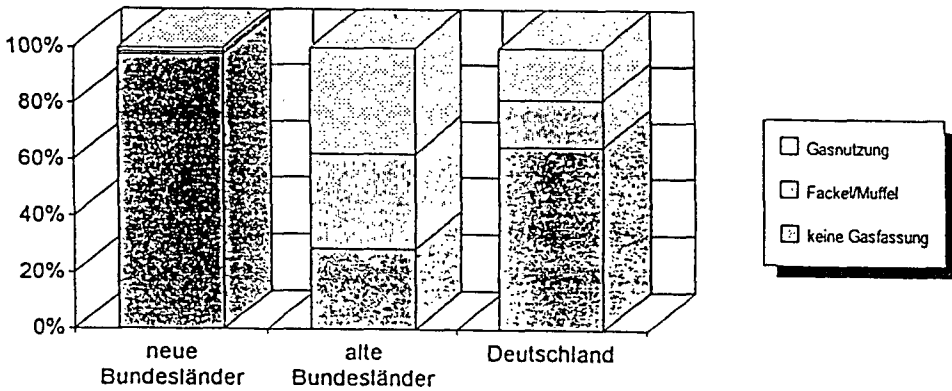
Land	Anzahl der Deponien			
	Ende 1990	Ende 1991 gerundet	1992	nach 1995 geplant
Berlin	3	3	2	0
Brandenburg	1 399	500	66 ¹⁾	max. 23 ²⁾
Mecklenburg-Vorpommern	1 314	635	477	5—10
Sachsen	1 800	150	80	14
Sachsen-Anhalt	1 989	130	100	12
Thüringen	1 182	340	52	25—30
Summe insgesamt	7 687	1 758	777	ca. 80

1) 5 Hausmülldeponien, eine Sonderabfalldeponie

2) maximal 20 Hausmülldeponien, drei Sonderabfalldeponien

Nummer 17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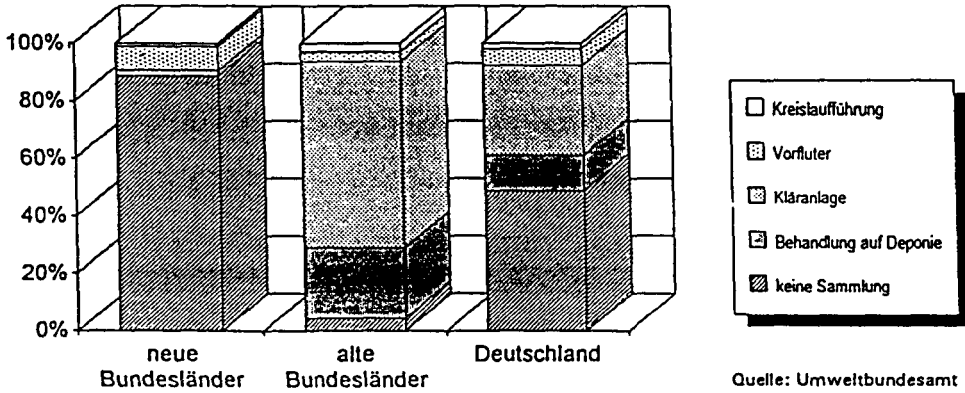
Deponiegas



Quelle: Umweltbundesa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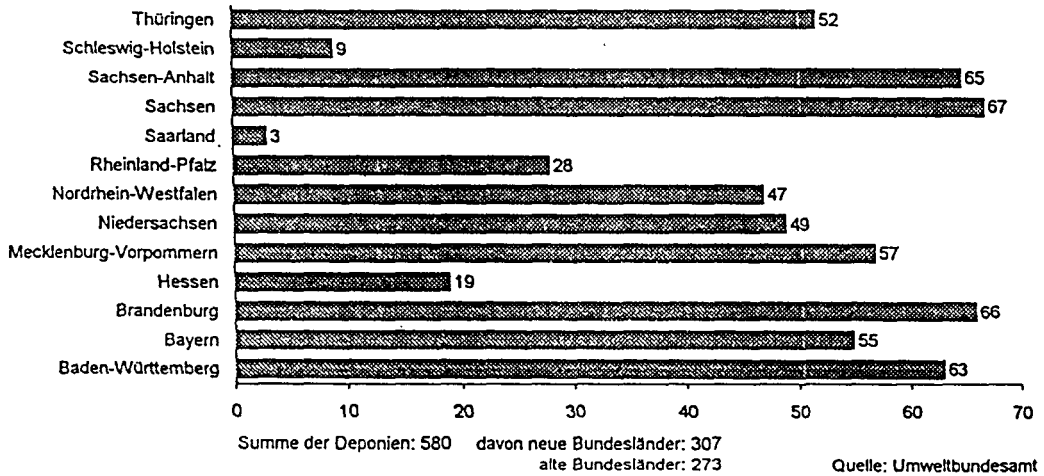
Nummer 178b

Sickerwasser



Nummer 178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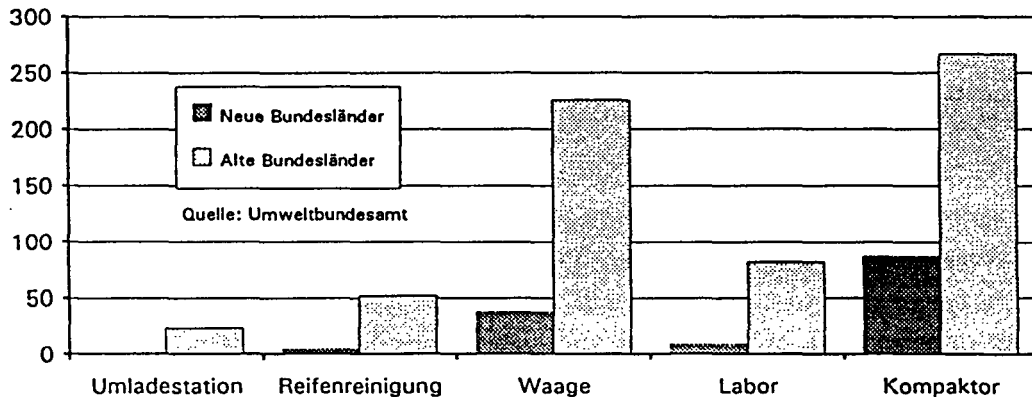
Bestand an Hausmülldeponien im Jahr 1992



Nummer 178d

Technische Ausstattung

Depon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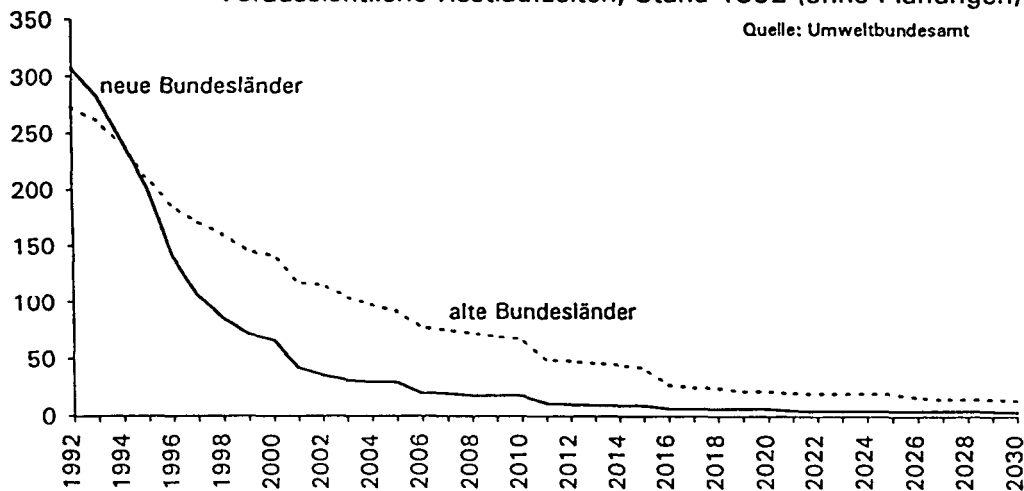


Nummer 178e

Voraussichtliche Restlaufzeiten, Stand 1992 (ohne Planun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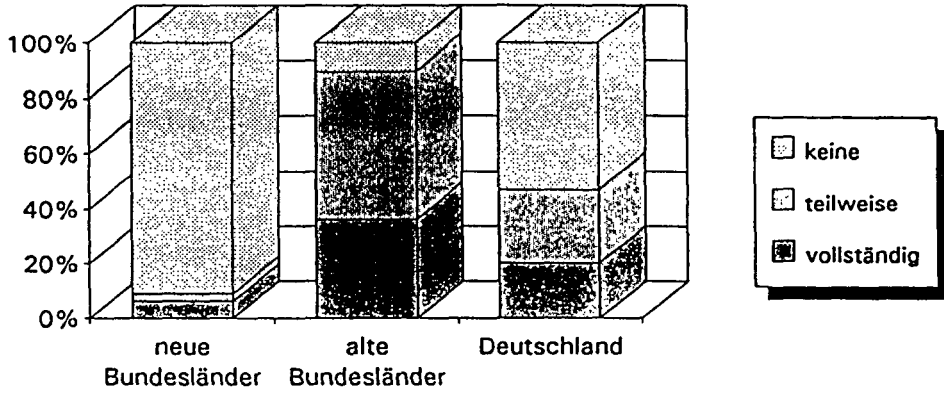
Deponien

Quelle: Umweltbundesamt



Nummer 178f

Basisabdichtung



Quelle: Umweltbundesamt

Nummer 179**Anhang zum Textbeitrag Städtebau und Raumordnung des BMBau****Übersicht****Finanzhilfen des Bundes für die Städtebau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Seit dem ersten Halbjahr 1990 wurden bzw. werden für die Stadtsanierung und -erneuerung Finanzhilfen in folgenden Programmen bereitgestellt:

I. Projektfonds DDR

Erstes Halbjahr 1990 768,215 Mio. M der DDR
(100 % Bezuschussung des Bundes)

II. Sofortprogramm 1990/1991

		— Angaben in Mio. DM —	
Zweites Halbjahr 1990		509,250	
davon: — städtebauliche			
	Modellvorhaben	83,700	
	— städtebauliche		
	Stadtsanierung	405,000	
	— Planungsförderfonds	20,550	
Verpflichtungsermächtigung 1991		530,000	
davon: — städtebauliche			
	Modellvorhaben	132,000	
	— städtebauliche		
	Stadtsanierung	398,000	
Sofortprogramm 1990/1991 insgesamt		1 039,250	(100 % Bezuschussung des Bundes)

III. Städtebauliche Sanierungs- und Entwicklungsmaßnahmen

	Finanzhilfen des Bundes	Programmvolumen insgesamt
Beteiligung des Bundes seit 1991	33 ¹ / ₃ %	
1991	300,0	900,0
1992	300,0	900,0
1993	340,0	1 020,0
1994	340,0	1 020,0
	1 280,0	3 840,0

IV. Städtebauliche Planungsleistungen

Beteiligung des Bundes seit 1991 33¹/₃ %

1991	50,0	150,0
1992	50,0	150,0
	100,0	300,0

V. Städtebauliche Modellvorhaben

Beteiligung des Bundes

1991 bis 1992 80 %

1991		104,9 ¹)	131,125
1992		100,0	125,000
1993	60 %	80,0	133,333
1994	45 %	80,0	177,777
		364,9 ¹)	567,235

¹) Aus Umschichtungen GAO-Wohnungsbauförderung Erhöhung zugunsten Modellvorhaben: 4,9 Mio. DM

VI. Städtebaulicher Denkmalschutz

	Finanzhilfen des Bundes	Programmvolumen insgesamt
Beteiligung des Bundes		
1991 bis 1992 50 %		
1991	189,6 ²⁾	379,2
1992	180,0	360,0
1993 50 %	80,0	160,0
40 %	120,0	300,0
1994 50 %	80,0	160,0
33 ¹ / ₃ %	<u>120,0</u>	<u>360,0</u>
	769,6 ²⁾	1 659,2

VII. Erschließung von Wohngebieten

Beteiligung des Bundes		
1993 50 %	200,0	400,0

VIII. Städtebauliche Entwicklungsmaßnahmen zur Entwicklung von Wohngebieten

Beteiligung des Bundes		
1993 33 ¹ / ₃ %	100,0	300,0

IX. Städtebauliche Weiterentwicklung großer Neubaugebiete

Beteiligung des Bundes		
1993 33 ¹ / ₃ %	<u>100,0</u>	<u>300,0</u>

Summe:

— der Finanzhilfen des Bundes	3 953,75	
seit 1990 (Sofortprogramm 2. Halb-		
jahr 1990 bis 1994)		
— des mit öffentlichen Mitteln ange-		
schobenen Investitionsvolumens seit		
1990 (Sofortprogramm 2. Halbjahr		
1990) bis 1994		8 405,685

²⁾ Aus Umschichtungen GAO-Wohnungsbauförderung Erhöhung zugunsten Denkmalschutz: 9,6 Mio. DM

Nummer 180

Arbeitsmarktdat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¹⁾

		Arbeitslose	Kurzarbeiter	Teilnehmer ²⁾ an FuU-Maßnahmen	Beschäftigte in ABM	Empfänger von Vorruhestands-/Altersübergangsgeld	Beschäftigte, die nach § 249h AFG gefördert werden
Juni	1990	142 100					
Juli	1990	272 000	656 300				
Oktober	1990	536 800	1 703 800		8 400		
Dezember	1990	642 200	1 794 000		20 300		
Januar	1991	757 200	1 840 600		34 400		
April	1991	836 900	2 018 900	210 400	84 900	499 500	
Juli	1991	1 068 600	1 610 800	313 200	209 900	544 000	
Oktober	1991	1 048 500	1 199 900	382 900	348 400	622 900	
Dezember	1991	1 037 700	1 034 500	435 200	389 900	657 900	
Januar	1992	1 343 400	520 600	438 000	394 100	771 600	
April	1992	1 196 000	466 300	507 300	404 500	780 500	
Juli	1992	1 188 200	337 800	503 700	388 700	833 700	
Oktober	1992	1 097 500	240 000	499 200	369 700	837 300	
Dezember	1992	1 100 800	233 400	479 600	354 700	834 500	
Januar	1993	1 194 400	214 500	419 600	325 500	893 000	
März	1993	1 140 600	246 000	432 000	301 900	889 700	
April	1993	1 117 900	231 200	432 700	274 300	877 700	7 600
Juli	1993	1 166 500	155 300	378 600	198 300	847 600	24 800

¹⁾ Juni/Juli 1990 Daten der ehemaligen DDR

²⁾ Bis Dezember 1992 geschätzt

Quelle: Bundesanstalt für Arbeit

Nummer 181

Stand: Juli 1993

Aktive Arbeitsmarktpolitik

Personen

— in Tausend —

Förderungsbereich	1991		1992		1993 (Soll) ¹⁾	
	West	Ost	West	Ost	West	Ost
Berufliche Weiterbildung						
Teilnehmer (JE)	386	435 ²⁾	397	480 ²⁾	335 (JD)	392 (JD)
Eintritte (JS)	594	892	575	888	—	—
Rehabilitation (berufsfördernde Bildungsmaßnahmen)						
Teilnehmer (JE)	112	8	121	23	77 (JD)	15 (JD)
Eintritte (JS)	102	11	108	22	—	—
FdA incl. Überbrückungsgeld (Bewilligungen) (JS)	235	—	237	164	262	217
Allgemeine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³⁾						
Arbeitnehmer in ABM (JD)	83	183	78	388	60	300
Vermittlungen in ABM (JS)	98	422	81	296	—	—
Arbeitnehmer nach § 249h AFG (JD)	—	—	—	—	—	51
Lohnkostenzuschüsse für ältere Arbeitnehmer (JE)	29	—	29	3	33 (JD)	8 (JD)
Beschäftigungshilfen für Langzeitarbeitslose (Bund) (JS)						
*) Lohnkostenzuschüsse (Bewilligungen)	25		19	10	14 (JD)	7 (JD)
*) Projektförderung (Bewilligungen)	9		14		—	—
Empfänger von Altersübergangs-/Vorruhestandsgeld (JD)	—	658 (JE)	—	811	—	827
Kurzarbeiter (JD)	145	1 616	283	370	800	250
Arbeitsmarktentlastungswirkung ⁴⁾	367	1 881	390	1 972	412	rd. 1700

JD = Jahresdurchschnitt; JE = Jahresendbestand; JS = Jahressumme; FdA = Förderung der Arbeitsaufnahme;

¹⁾ Annahmen zu den Haushalten 1993 von Bundesanstalt für Arbeit und Bund (Nachtragshaushaltsentwürfe berücksichtigt) und eigene Berechnungen.²⁾ Schätzung.³⁾ Einschließlich ABM aus dem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und dem ABM-Stabilisierungsprogramm des Bundes.⁴⁾ Vermiedene Arbeitslosigkeit durch ABM, FuU, Kurzarbeit und Vorruhestandsregelungen.

Nummer 182

Stand: Juli 1993

Aktive Arbeitsmarktpolitik

Finanzierung

— in Millionen DM —

Förderungsbereich	1991		1992		1993 (Soll) ¹⁾	
	West	Ost	West	Ost	West	Ost
Berufliche Bildung (indiv. und inst.)	7 648,9	5 250,2	8 190,5	12 060,4	7 345,1	11 252,5
Deutsch-Sprachförderung ²⁾	1 903,8	7,2	1 377,6	53,0	1 385,9 ³⁾	75,1 ³⁾
Berufliche Rehabilitation (indiv. u. inst.) . .	3 603,3	100,9	4 035,6	324,8	3 876,5	782,5
Förderung der Arbeitsaufnahme (incl. Überbrückungsgeld)	140,8	52,5	168,6	130,9	184,8	215,2
Allgemeine Arbeitsbeschaffungs- maßnahmen ⁴⁾	2 538,6	5 515,2	2 510,6	10 783,6	2 253,2	9 648,8
Prod. Arbeitsförderung Ost nach § 249h AFG	—	—	—	—	—	770,0 ⁵⁾
Lohnkostenzuschüsse für ältere Arbeitneh- mer	509,1	0,4	603,9	19,8	805,8	148,6
Beschäftigungshilfen für Langzeitarbeits- lose (Bund) ⁶⁾						
*) Lohnkostenzuschüsse	403,0 ⁷⁾	—	335,6	55,4	250,0	100,0
*) Projektförderung	83,1	—	123,2	6,4	119,0	34,0
Programm Weiterbildungseinrichtungen Ost (Bund) ⁸⁾	—	197,1	—	96,8	—	46,5
Modellprojekte zur Schaffung von Dauerar- beitsplätzen ⁹⁾	1,8	—	0,9	0,2	—	5,0
VRG/Altersteilzeit ¹⁰⁾	285,2	—	152,8	—	87,2	—
Altersübergangs-/Vorruhestandsgeld ¹¹⁾ . .	—	8 374,0	—	14 448,5	—	16 800,8
Kurzarbeitergeld (Kug)	478,8	10 005,9	949,9	2 652,5	2 775,0	1 378,6
Ausgaben insgesamt	17 596,4	29 503,4	18 449,0	40 632,3	19 082,5	41 257,6

1) Die Entwürfe zu den Nachtragshaushalten 1993 von Bundesanstalt für Arbeit und Bund sind berücksichtigt; die Aufschlüsselung nach Alten und Neuen Bundesländern erfolgt in Fällen ohne entsprechendes Datenmaterial unter Plausibilitäts Gesichtspunkten.

2) Sprachförderung für Spätaussiedler, anerkannte Asylberechtigte und Kontingentflüchtlinge.

3) Einschließlich Bundesmittel; eigene Berechnungen.

4) Einschließlich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1991: 2 439,9 Mio. DM; 1992: 3 000,0 Mio. DM) und ABM-Stabilisierungsprogramm des Bundes (1993: 2 000,0 Mio. DM; West: 240 Mio. DM; Ost: 1 760 Mio. DM).

5) Einschließlich Bundesmittel in Höhe von 170 Mio. DM.

6) Bundesprogramme „Aktion Beschäftigungshilfen für Langzeitarbeitslose“ und „Maßnahmen für besonders beeinträchtigte Langzeitarbeitslose und weitere schwervermittelbare Arbeitslose“.

7) Wegen fehlender Aufschlüsselung zwischen Ost und West werden die Ausgaben nur West zugerechnet.

8) Bundesprogramm „Förderung der Einrichtung von Institutionen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dem Ostteil Berlins“.

9) Bundesprogramm „Förderung der Erprobung neuer Wege in der Arbeitsmarktpolitik“.

10) VRG ausgelaufen am 31. 12. 1988, Altersteilzeitgesetz ausgelaufen am 31. Dezember 1992; für beide weiterhin Zahlungen für Altförderhilfe.

11) Einschließlich Bundesmittel für Vorruhestandsgeld (1991: 5 693,8 Mio. DM; 1992: 5 118,7 Mio. DM (vorläufig); 1993: 4 430 Mio. DM (Soll)) und Altersübergangsgeld (1993: 380 Mio. DM (Soll)).

Nummer 183

Entwicklung des Sozialbudgets in West- und Ostdeutschland, 1990 bis 1992

Leistungen nach Institutionen	Westdeutschland						Ostdeutschland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Mrd DM	Mrd DM	%	Mrd DM	%	Mrd DM	%	Mrd DM	%	Mrd DM	%	
Rentenversicherung	215,6	228,6	6,0	246,4	7,8	13,6	34,0	:	48,9	43,9		
Krankenversicherung	142,1	160,2	12,8	176,7	10,3	10,2	23,3	:	33,7	44,6		
Unfallversicherung	13,6	14,3	5,3	15,0	4,9	—	1,3	—	1,6	20,9		
Arbeitsförderung	49,3	74,2	50,7	93,2	25,6	2,5	38,4	:	55,4	44,3		
Kinder-/Erziehungsgeld	19,2	20,6	7,4	24,2	17,1	—	5,8	—	5,8	1,5		
Altershilfe f. Landwirte	4,4	4,8	8,9	5,3	8,8	—	—	—	—	—		
Versorgungswerke	2,0	2,2	7,1	2,4	8,5	—	—	—	0,0	—		
Beamtenrechtl. System	63,8	67,4	5,6	69,8	3,6	—	1,3	—	1,4	8,4		
Arbeitgeberleistungen	73,4	78,7	7,2	83,0	5,5	—	4,4	—	5,9	32,7		
Entschädigungen	16,8	17,0	1,5	17,1	0,3	—	0,6	—	1,2	:		
Sozialhilfe	33,6	36,4	8,0	40,1	10,3	0,1	4,3	:	3,8	-11,9		
Jugendhilfe	13,7	14,4	5,0	15,1	5,1	—	5,2	—	5,5	5,8		
Ausbildungsförderung	0,8	1,9	:	2,0	6,2	—	0,7	—	0,5	:		
Wohngeld	3,9	3,9	0,2	4,1	5,8	—	1,0	—	3,3	:		
öff. Gesundheitsdienst	2,4	2,5	5,4	2,7	5,1	—	0,6	—	0,6	5,0		
Förd. d. Vermögensbildung	10,6	11,0	3,5	11,1	0,8	—	0,4	—	0,6	:		
Direkte Leistungen (*)	661,9	734,5	11,0	804,4	9,5	26,4	121,2	—	168,2	38,8		
Pro Kopf der Bevölkerung DM	:	:	:	:	:	:	7 621	:	10 679	40,1		
Ohne West-Ost-Transfers:												
Direkte Leistungen (*)	661,9	709,3	7,2	761,8	7,4	—	—	—	—	—		
Pro Kopf der Bevölkerung DM	10 472	11 065	5,7	11 760	6,3	—	—	—	—	—		
+ Indirekte Leistungen	55,7	59,1	6,2	65,6	11,0	—	3,6	—	5,7	59,3		
Sozialbudget insgesamt (*)	717,6	793,7	10,6	870,0	9,6	26,4	124,8	—	173,9	39,3		
Pro Kopf der Bevölkerung DM	:	:	:	:	:	:	7 847	:	11 042	40,7		
Ohne West-Ost-Transfers:												
Sozialbudget insgesamt (*)	717,6	768,4	7,1	827,4	7,7	—	—	—	—	—		
Pro Kopf der Bevölkerung DM	11 353	11 987	5,6	12 773	6,6	—	—	—	—	—		
Sozialleistungsquote in v. H.												
— alle Leistungen	29,4	30,2	—	31,4	—	26,5	63,9	—	70,5	—		
— nur direkte Leistungen	27,1	27,9	—	29,0	—	26,5	62,0	—	68,1	—		
Ohne West-Ost-Transfers:												
— alle Leistungen	29,4	29,2	—	29,8	—	—	—	—	—	—		
— nur direkte Leistungen	27,1	27,0	—	27,5	—	—	—	—	—	—		

%) Veränderung gegenüber dem vorgenannten Berichtsjahr in v. H. — *) Nach Abzug von Verrechnungen zwischen den Sozialversicherungsträgern. Alle Angaben vorläufig, erneute Revision der Daten erfolgt im Sommer 1993. Die Angaben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für 1990 beziehen sich auf das 2. Halbjahr.

Quelle: BMA

Nummer 184

Ergebnisse der Rentenbestandsaufnahme zum 1. Juli 1992 — Westdeutschland —

Versicherungszweig/ Geschlecht	Renten insgesamt	davon							Sonderleistungen		
		Versichertenrenten			Renten wegen Todes				Knappschafts- ausgleichs- leistung	Reine KLG-Leistung	
		insgesamt	Renten wegen verminderter Erwerbs- fähigkeit	Renten wegen Alters	insgesamt	Erziehungs- renten	Witwen/ Witwer- renten	Waisen- renten			
1	2	3	4	5	6	7	8	9	10	11	
Anzahl der Renten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Männer	2 940 680	2 883 904	638 894	2 245 010	56 876	9	56 967				
Frauen	6 136 390	3 503 956	293 157	3 210 799	2 632 434	634	2 631 600				373 369
Männer und Frauen	9 277 310	6 387 860	932 051	5 455 809	2 689 450	643	2 688 567	200 040			373 369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Männer	1 607 960	1 571 027	157 818	1 413 209	36 933	5	36 928				
Frauen	3 627 655	2 358 269	220 483	2 137 786	1 269 386	601	1 268 785				124 712
Männer und Frauen	5 355 650	3 929 296	378 301	3 550 995	1 426 354	606	1 305 713	120 035			124 712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Männer	4 548 640	4 454 931	796 712	3 658 219	93 809	14	93 895				
Frauen	9 764 045	5 862 225	513 640	5 348 585	3 901 820	1 435	3 900 385				498 081
Männer und Frauen	14 632 960	10 317 156	1 310 352	9 006 804	4 315 604	1 449	3 994 280	320 075			498 081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352 480	352 031	75 583	276 448	449		449		15 466		
Frauen	328 766	29 785	2 911	26 874	298 881		298 881				24 182
Männer und Frauen	689 494	381 816	78 494	303 322	307 678		297 430	10 248	15 466		24 182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4 901 320	4 806 962	872 295	3 934 667	94 358	14	94 344		15 466		
Frauen	10 090 811	5 992 010	518 551	5 375 459	4 198 801	1 435	4 197 366				622 263
Männer und Frauen	15 322 454	10 698 972	1 388 846	9 310 126	4 623 482	1 449	4 291 710	330 323	15 466		622 263
Durchschnittlicher Rentenzahlungsbetrag (DM/Monat)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Männer		1 455,94	1 321,44	1 494,21		935,27	248,83				
Frauen		571,89	744,74	556,11		617,48	628,46				
Männer und Frauen		971,01	1 140,06	942,13		620,87	614,22	260,10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Männer		1 988,66	1 637,84	2 027,84		983,89	397,54				
Frauen		955,29	1 016,02	949,03		711,19	1 146,72				
Männer und Frauen		1 368,46	1 275,43	1 378,37		713,44	1 125,54	286,10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Männer		1 643,80	1 384,12	1 700,36		952,64	307,32				
Frauen		726,13	861,19	713,15		656,73	930,64				
Männer und Frauen		1 122,36	1 179,14	1 114,12		659,59	915,99	270,80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2 289,84	1 640,80	2 467,29			507,38		2 446,31		
Frauen		1 121,23	1 143,13	1 118,86			1 324,34				
Männer und Frauen		2 198,68	1 622,34	2 347,82			1 323,10	323,94	2 446,31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1 691,11	1 406,36	1 754,24		952,64	306,27		2 446,31		
Frauen		728,12	862,78	715,18		656,73	936,50				
Männer und Frauen		1 160,79	1 204,19	1 154,31		659,59	944,20	272,26	2 446,31		
Durchschnittlicher Auszahlungsbetrag (DM/Monat)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Männer		1 455,94	1 321,44	1 494,21		935,27	248,83				
Frauen		800,44	744,74	587,26		617,48	841,60				90,65
Männer und Frauen		968,67	1 140,06	960,46		620,87	629,04	260,10			90,65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Männer		1 988,66	1 637,84	2 027,84		983,89	397,54				
Frauen		970,56	1 016,02	965,87		711,19	1 180,35				78,24
Männer und Frauen		1 377,62	1 275,43	1 388,51		713,44	1 139,78	286,10			78,24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Männer		1 643,80	1 384,12	1 700,36		952,64	307,32				
Frauen		749,33	861,19	736,59		656,73	945,29				67,54
Männer und Frauen		1 135,56	1 179,14	1 129,22		659,59	930,29	270,80			67,54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2 289,84	1 640,80	2 467,29			507,38		2 446,31		
Frauen		1 140,41	1 143,13	1 140,12			1 349,75				63,19
Männer und Frauen		2 200,17	1 622,34	2 349,70			1 348,48	323,94	2 446,31		63,19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1 691,11	1 406,36	1 754,24		952,64	308,27		2 446,31		
Frauen		751,31	862,78	740,60		656,73	973,91				67,34
Männer und Frauen		1 173,56	1 204,19	1 168,99		659,59	959,27	272,26	2 446,31		67,34

Quelle: BMA, Die Rentenbestände in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1. Juli 1992), Bonn 1992

Nummer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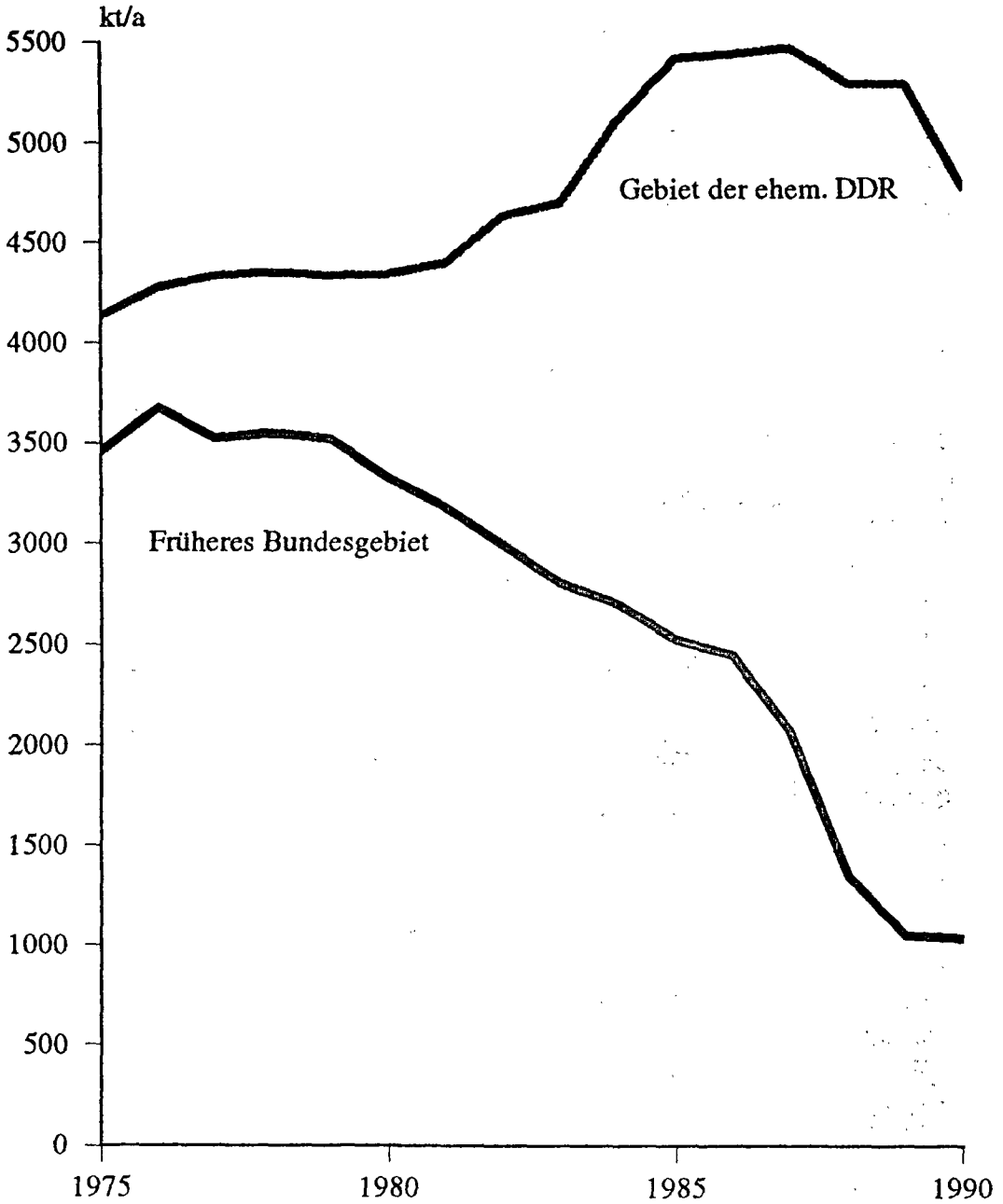
Ergebnisse der Rentenbestandsaufnahme zum 1. Juli 1992 — Ostdeutschland —

Versicherungs- zweig/ Geschlecht	Renten insgesamt	davon							Sonstige Leistungen		
		Versichertenrenten			Renten wegen Todes				Knappschafts- ausgleichs- leistung	Reine KLG-Leistung	
		insgesamt	Renten wegen verminderter Erwerbs- fähigkeit	Renten wegen Alters	insgesamt	Erziehungs- renten	Witwen/ Witwen- renten	Waisen- renten			
1	2	3	4	5	6	7	8	9	10	11	
Anzahl der Renten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Männer	443 000	434 930	106 464	329 466	8 070	—	8 070	—	—	—	—
Frauen	1 349 676	958 956	71 222	887 734	390 720	4	390 716	—	—	—	1
Männer und Frauen	1 839 819	1 393 886	177 686	1 216 200	445 933	4	398 786	47 143	—	—	1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Männer	389 158	381 072	92 025	289 047	8 086	—	8 086	—	—	—	—
Frauen	1 427 397	980 185	87 845	892 340	447 212	22	447 190	—	—	—	29
Männer und Frauen	1 852 315	1 361 257	179 870	1 181 387	491 058	22	455 276	35 780	—	—	29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Männer	832 158	816 002	198 489	617 513	16 156	—	16 156	—	—	—	—
Frauen	2 777 073	1 939 141	159 067	1 780 074	837 932	26	837 906	—	—	—	30
Männer und Frauen	3 692 134	2 755 143	357 556	2 397 587	936 991	26	854 062	82 903	—	—	30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110 504	107 519	33 019	74 500	2 985	—	2 985	—	—	4	—
Frauen	170 345	83 384	3 173	80 211	78 981	—	78 981	—	—	—	—
Männer und Frauen	283 632	200 903	36 192	164 711	82 729	—	79 946	2 783	—	4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942 662	923 521	231 506	692 013	19 141	—	19 141	—	—	4	—
Frauen	2 947 418	2 032 525	182 240	1 870 285	914 893	26	914 867	—	—	—	30
Männer und Frauen	3 975 766	2 956 046	353 746	2 562 298	1 019 720	26	934 006	85 686	—	4	30
Durchschnittlicher Rentenzahlbetrag (DM/Monat)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Männer	—	1 207,23	1 143,31	1 227,94	—	—	178,14	—	—	—	—
Frauen	—	819,09	824,55	808,82	—	336,32	478,81	—	—	—	—
Männer und Frauen	—	940,20	1 059,63	922,75	—	336,32	472,68	341,24	—	—	—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Männer	—	1 255,04	1 091,92	1 306,97	—	—	197,23	—	—	—	—
Frauen	—	838,85	901,26	832,71	—	358,67	471,82	—	—	—	—
Männer und Frauen	—	955,36	996,89	946,74	—	358,67	468,94	331,75	—	—	—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Männer	—	1 229,55	1 119,48	1 264,94	—	—	186,70	—	—	—	—
Frauen	—	829,08	918,16	821,30	—	358,68	475,08	—	—	—	—
Männer und Frauen	—	947,69	1 029,03	935,56	—	358,68	469,82	337,14	—	—	—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	1 335,79	981,84	1 492,67	—	—	471,86	—	1 372,42	—	—
Frauen	—	771,17	1 052,40	781,29	—	—	748,99	—	—	—	—
Männer und Frauen	—	1 073,35	988,03	1 092,09	—	—	736,64	462,15	1 372,42	—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	1 241,82	1 099,85	1 289,45	—	—	231,14	—	1 372,42	—	—
Frauen	—	826,42	918,83	818,40	—	358,68	498,12	—	—	—	—
Männer und Frauen	—	956,23	1 025,26	945,82	—	358,68	492,65	341,20	1 372,42	—	—
Durchschnittlicher Auszahlungsbeitrag (DM/Monat)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Männer	—	1 210,98	1 144,80	1 232,43	—	—	178,48	—	—	—	—
Frauen	—	824,99	941,54	815,64	—	336,32	480,18	—	—	—	84,00
Männer und Frauen	—	945,43	1 063,33	928,20	—	336,32	474,04	341,24	—	—	84,00
Rentenversicherung der Angestellten											
Männer	—	1 277,46	1 116,99	1 326,55	—	—	198,42	—	—	—	—
Frauen	—	852,00	929,84	844,35	—	358,67	477,27	—	—	—	58,36
Männer und Frauen	—	971,10	1 025,49	962,82	—	358,67	472,31	332,06	—	—	58,36
Rentenversicherung der Arbeiter und der Angestellten											
Männer	—	1 242,02	1 131,91	1 277,42	—	—	187,46	—	—	—	—
Frauen	—	836,84	934,87	830,03	—	358,68	476,63	—	—	—	58,67
Männer und Frauen	—	958,11	1 044,30	945,29	—	358,68	473,12	337,26	—	—	58,67
Knappschaft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	1 337,66	982,05	1 495,27	—	—	472,70	—	1 372,42	—	—
Frauen	—	772,96	1 054,31	783,06	—	—	748,77	—	—	—	—
Männer und Frauen	—	1 075,17	988,38	1 094,24	—	—	736,42	462,15	1 372,42	—	—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Männer	—	1 253,16	1 110,53	1 300,87	—	—	231,94	—	1 372,42	—	—
Frauen	—	835,62	937,31	828,80	—	358,68	501,44	—	—	—	58,57
Männer und Frauen	—	966,07	1 029,16	954,84	—	358,68	495,91	341,33	1 372,42	—	58,57

Quelle: BMA, a. a. O.

Nummer 18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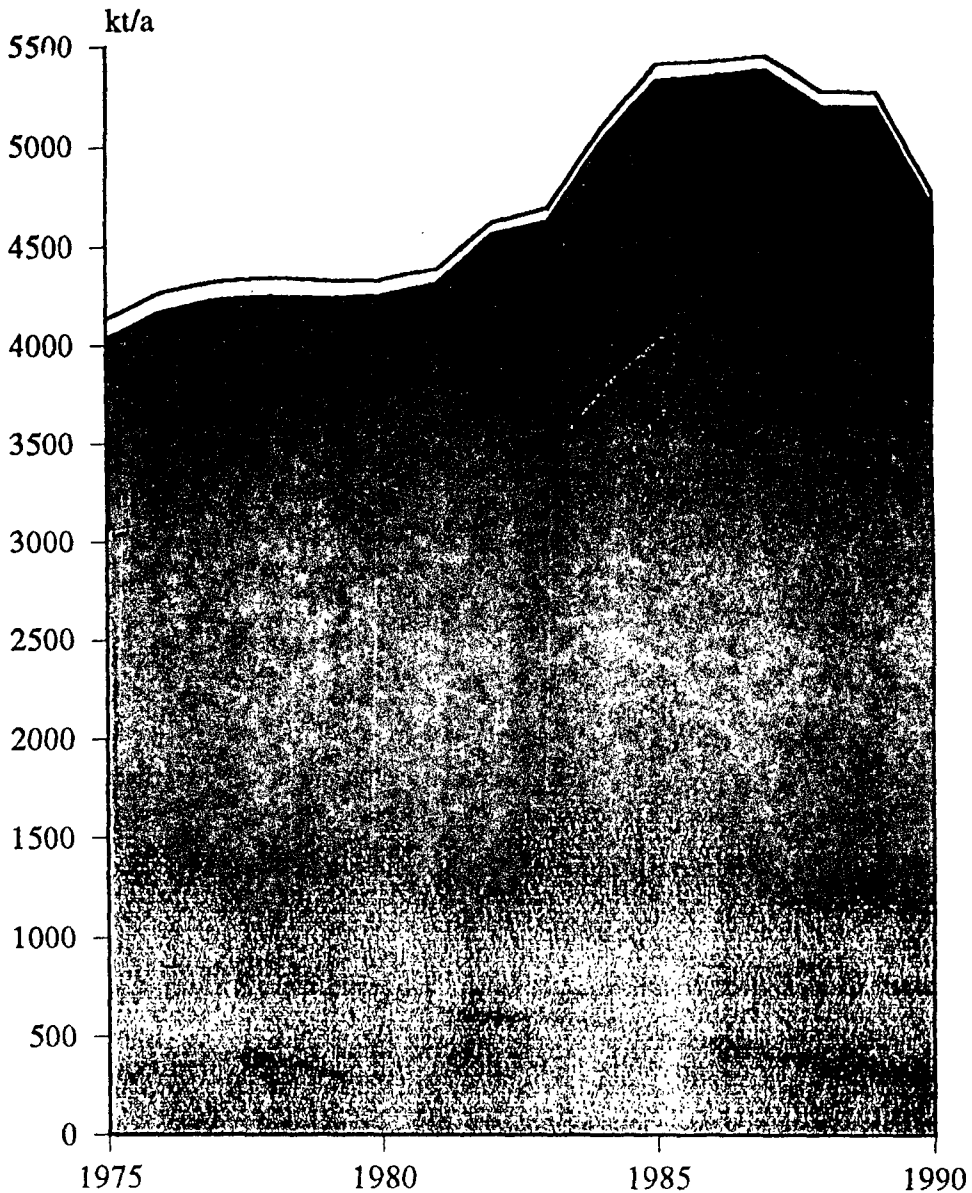
Schwefeldioxid-Emissionen (SO₂) nach Sektoren



Quelle: Umweltbundesamt

Nummer 186b

Schwefeldioxid-Emissionen (SO₂) nach Sektoren im Gebiet der ehem. D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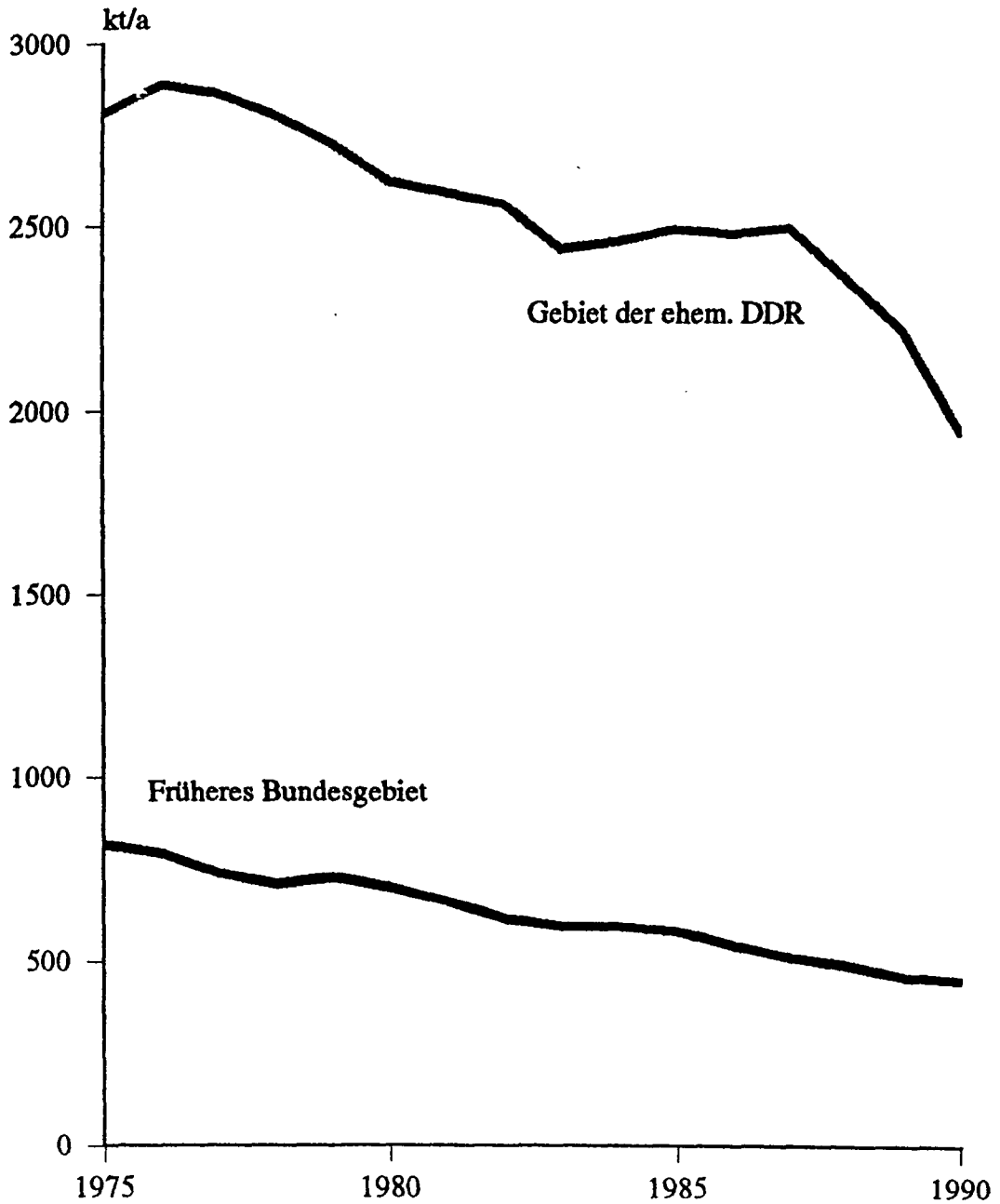


- Kraft- u. Fernheizwerke
- Industrie
- Haushalte u. Kleinverbraucher
- Verkehr

Quelle: Umweltbundesamt

Nummer 18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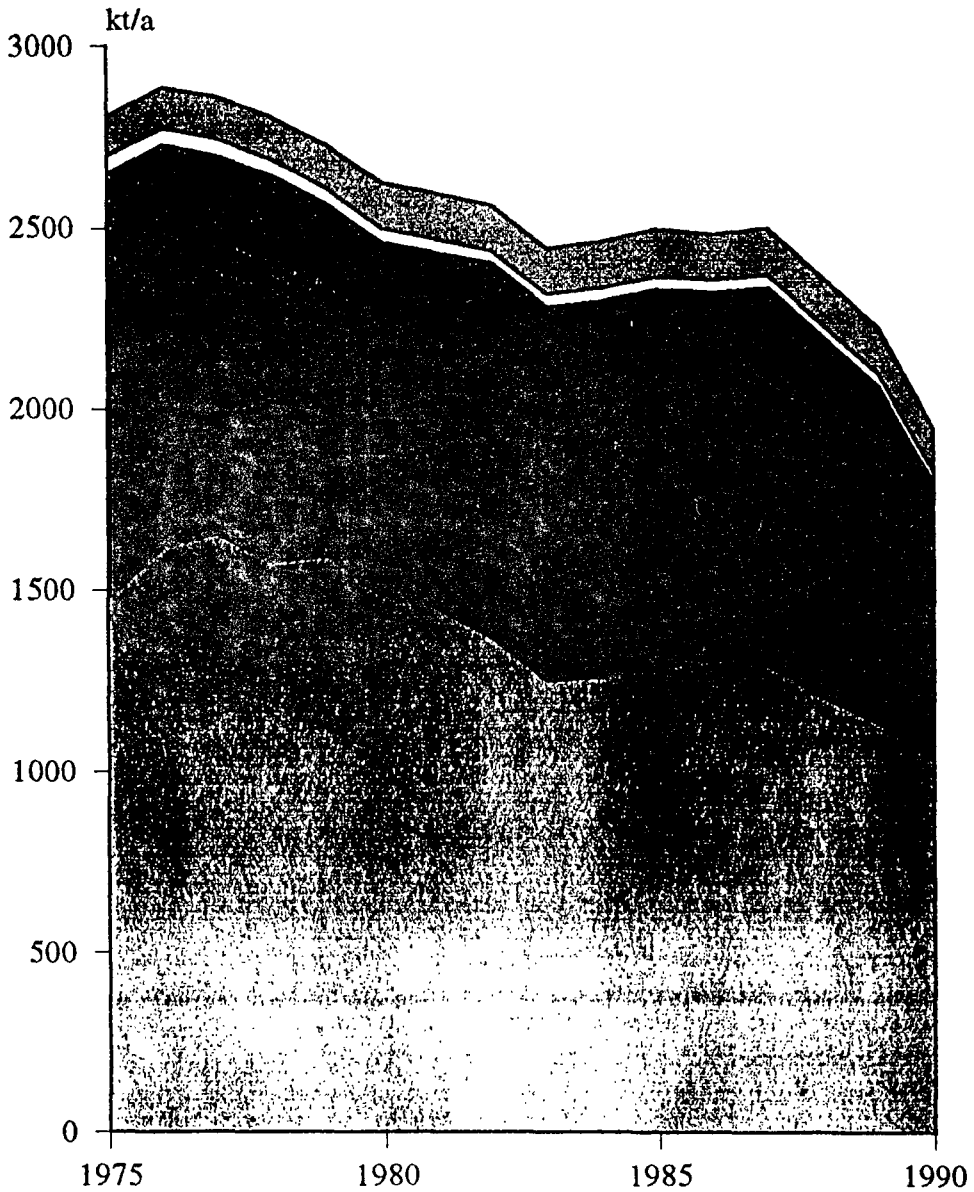
Staub-Emissionen nach Sektoren



Quelle: Umweltbundesamt

Nummer 186 d

Staub-Emissionen nach Sektoren im Gebiet der ehem. D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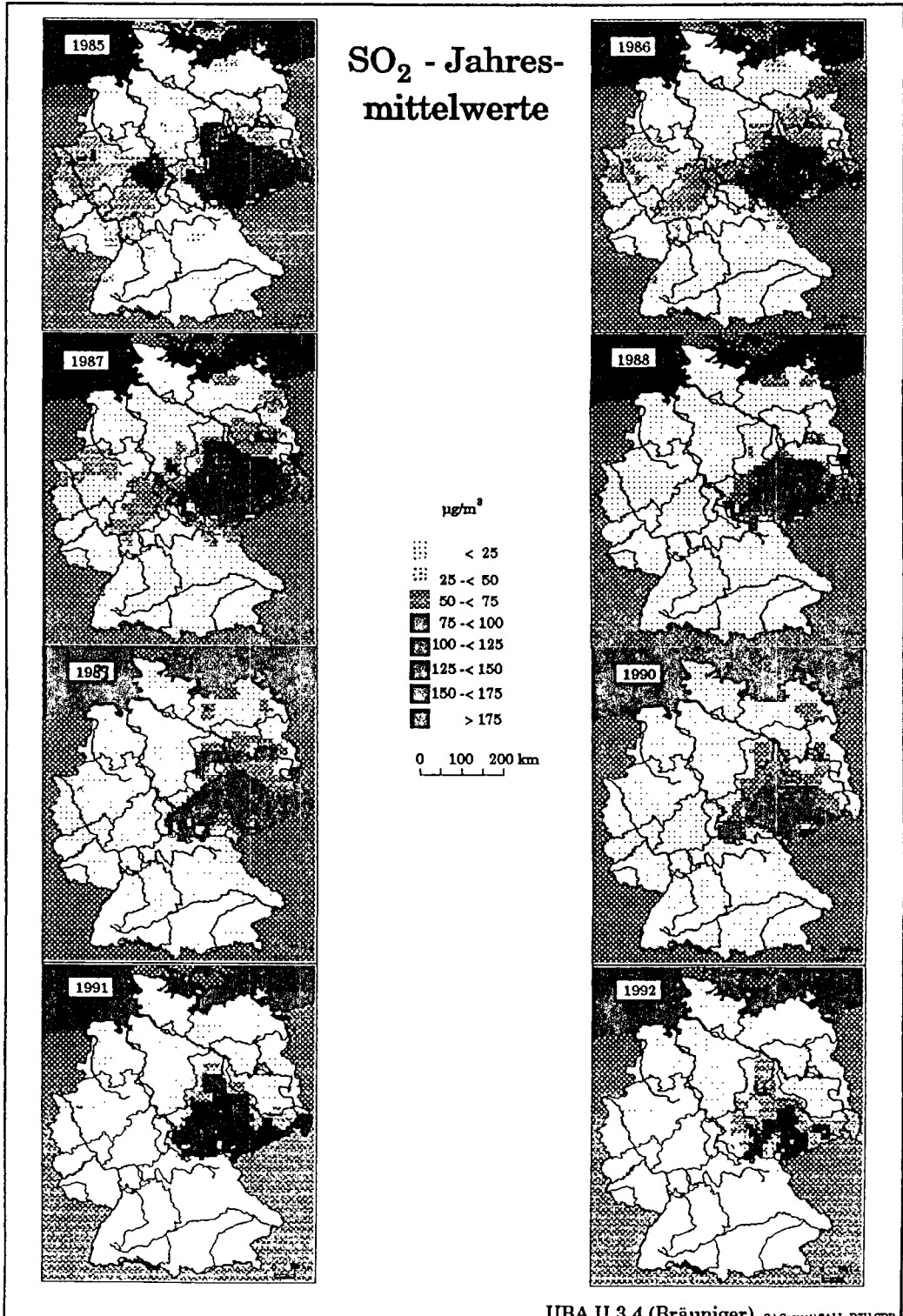
- Kraft- u. Fernheizwerke
 Industrie
 Schüttgutumschlag 1)
- Haushalte u. Kleinverbraucher
 Verkehr

1) für 1990 geschätz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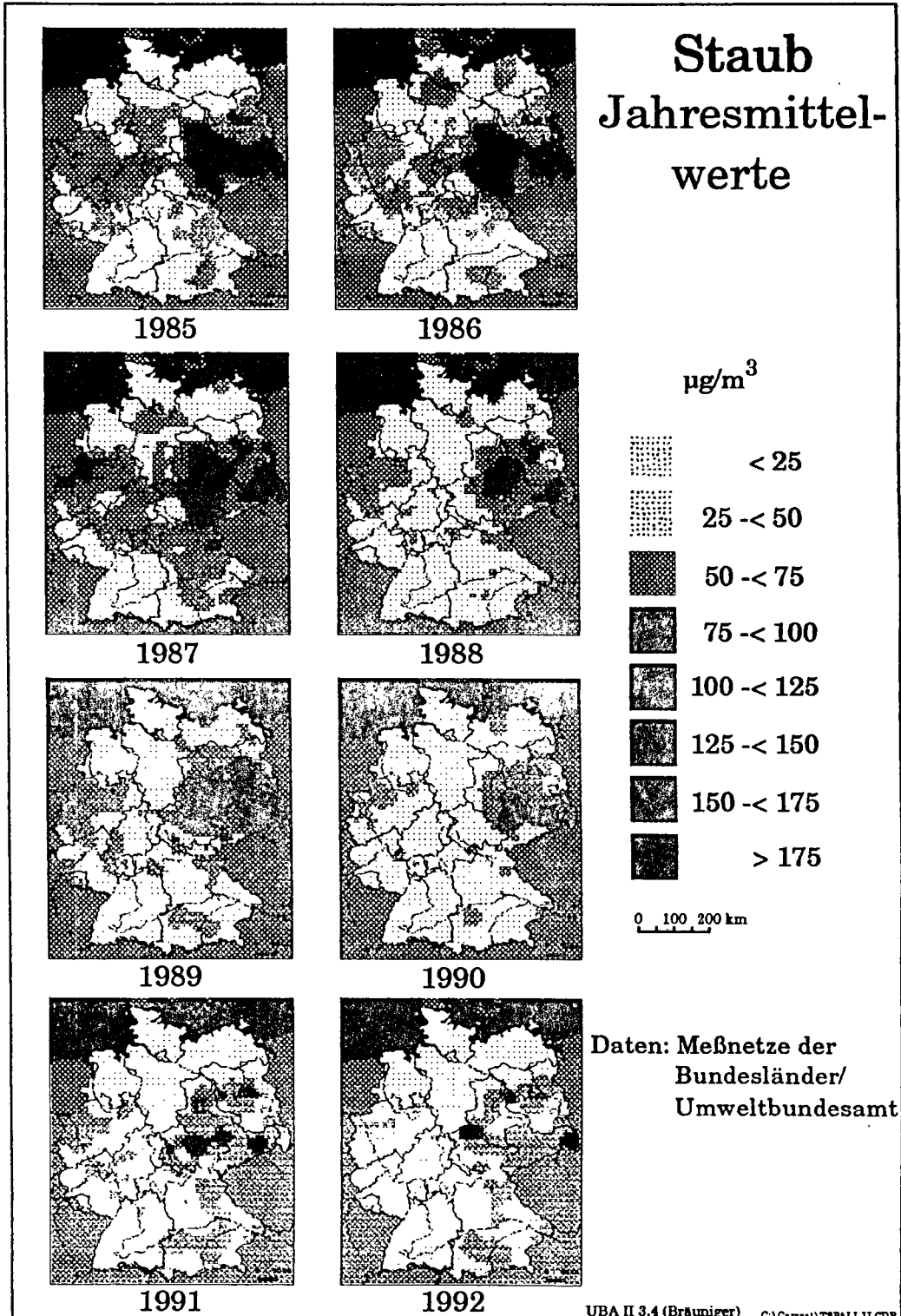
Quelle: Umweltbundesamt

Im Original farb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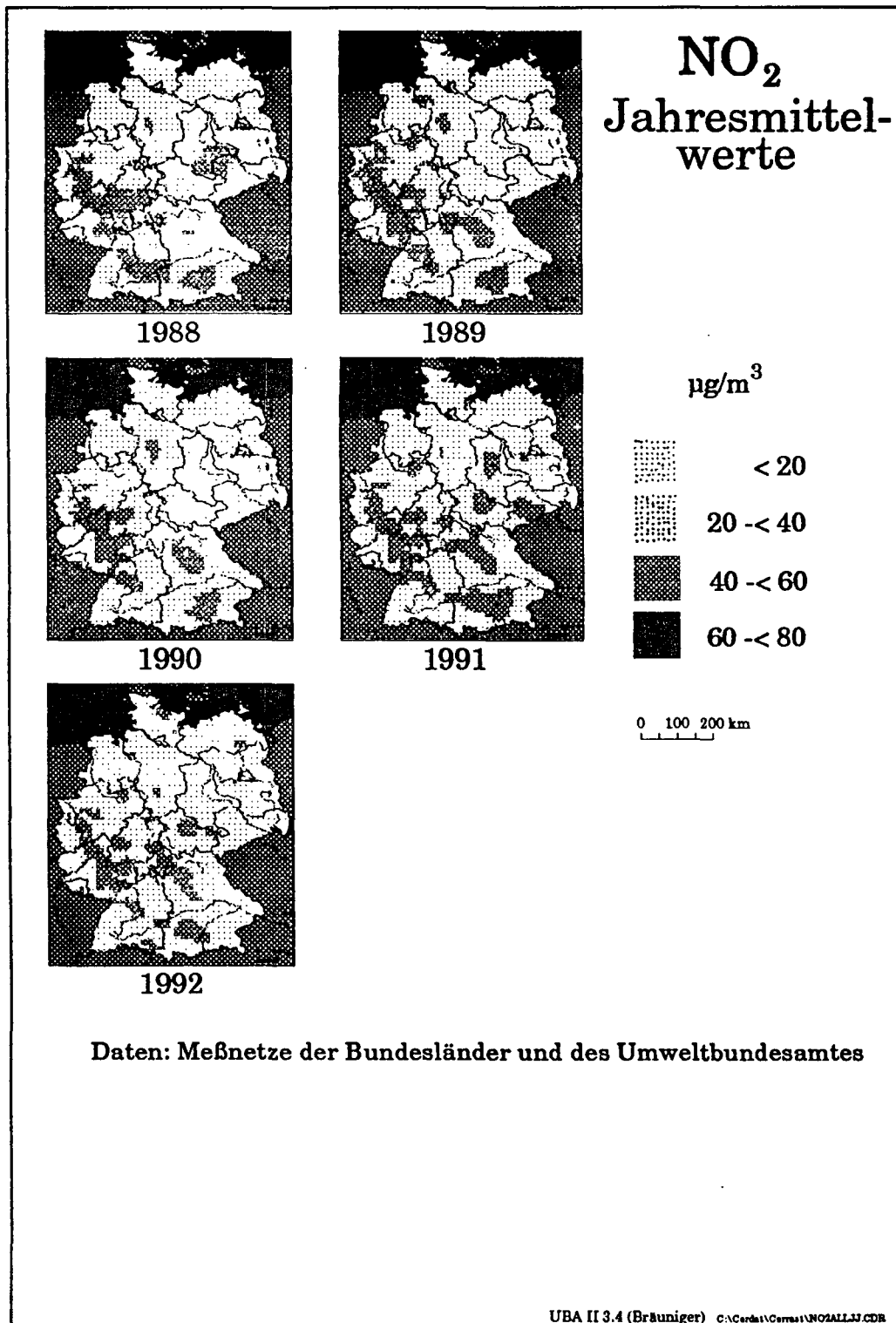
Nummer 186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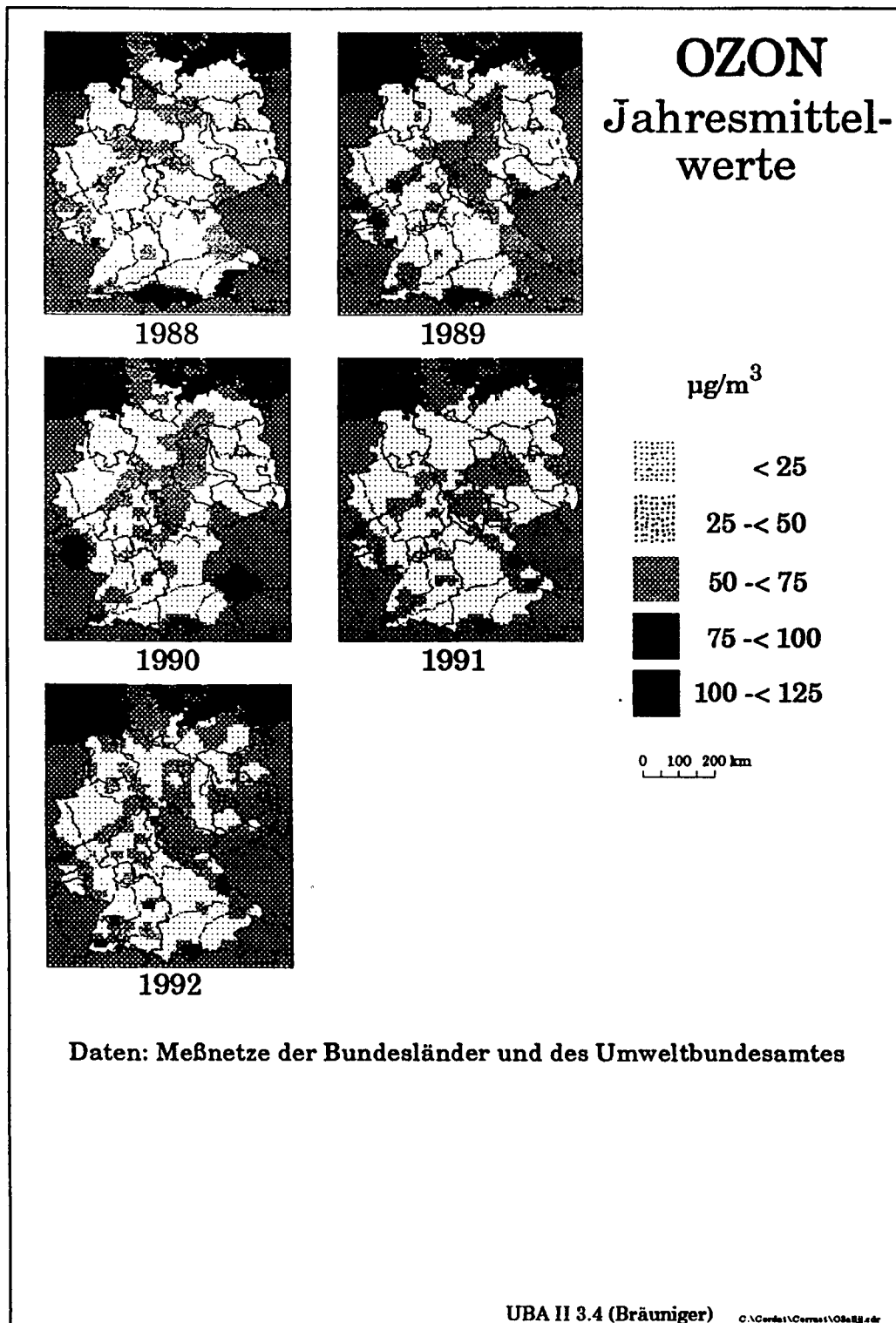
Nummer 186f



Nummer 186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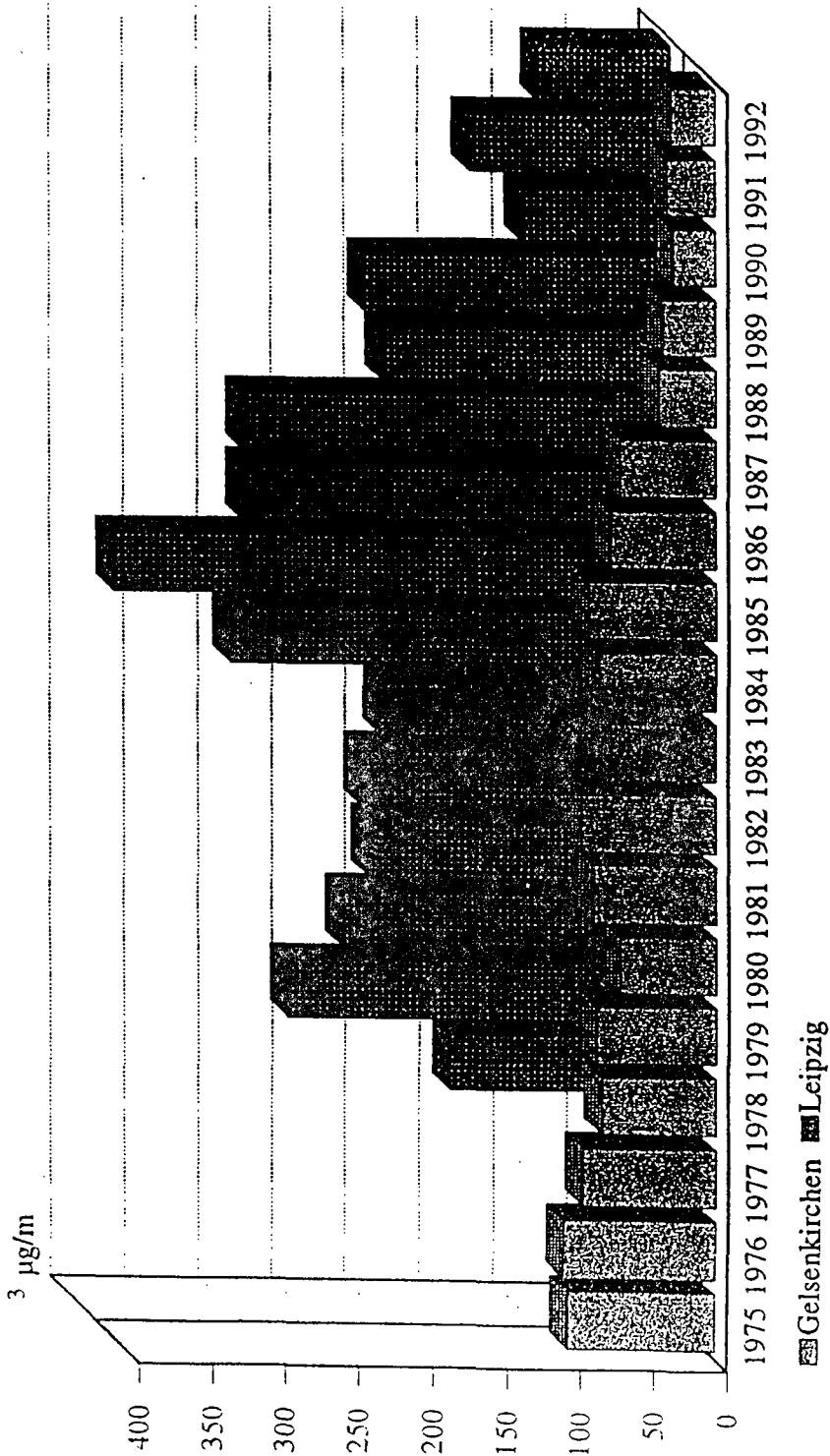


Nummer 186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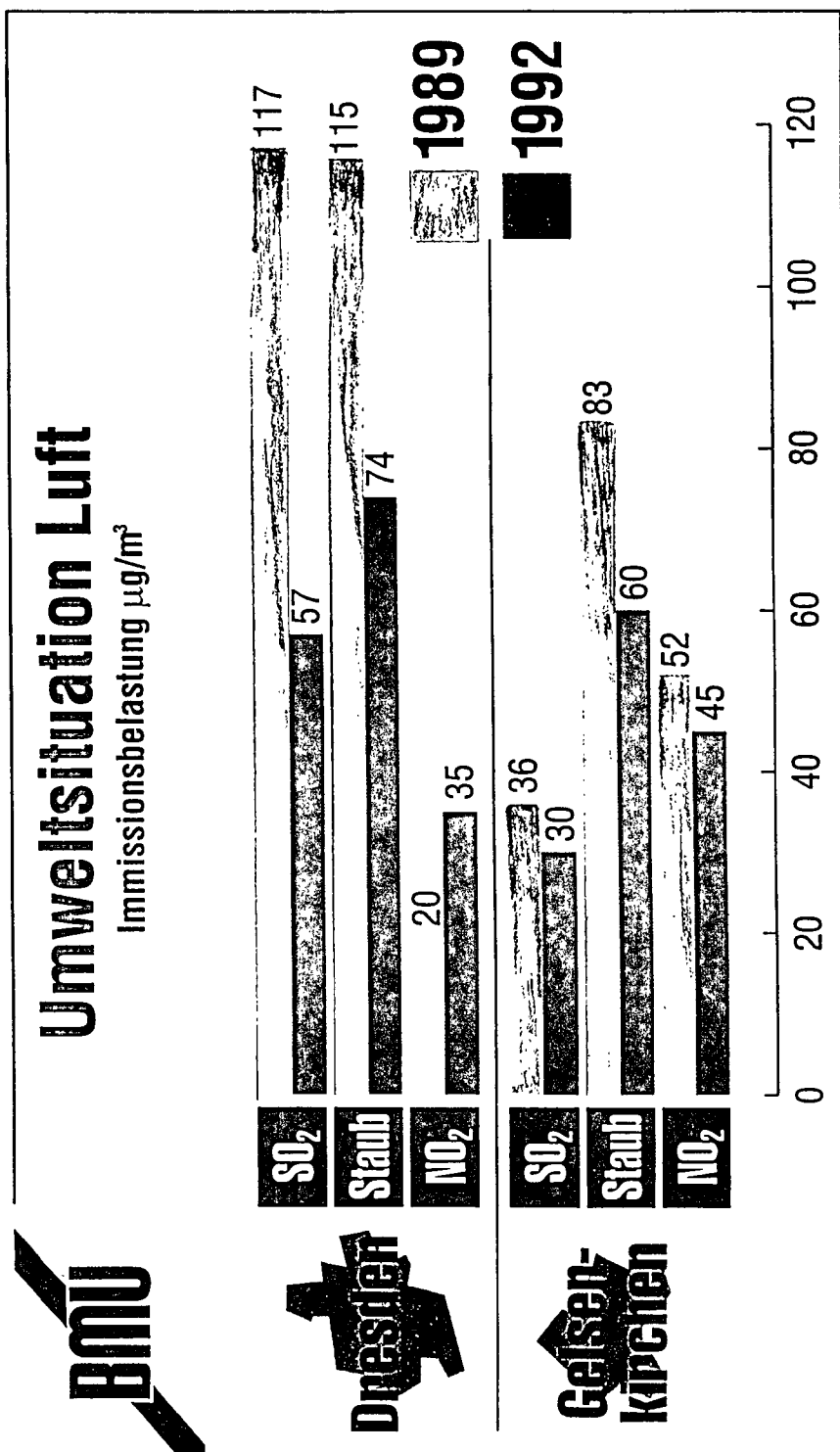
Nummer 187

Vergleich der SO₂-Jahresmittelwerte Gelsenkirchen-Leipzig



Quelle: Hygieneinstitut des Ruhrgebietes, Hygieneinstitut Leipz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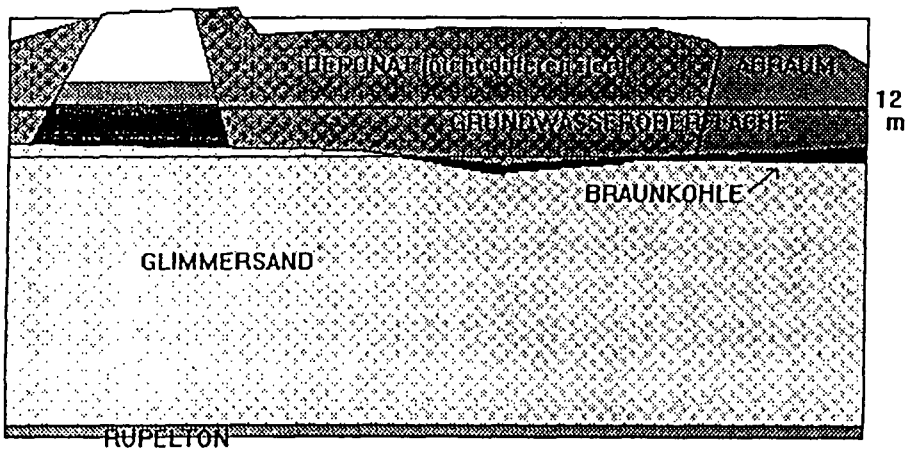
Nummer 188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ummer 189

PROFIL DER DEPONIE "ANTONIE"
(CHEMIE AG, BITTERFELD)



Nummer 190a

17. 12. 90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r. L 353/59

RICHTLINIE DES RATES

vom 4. Dezember 1990

über die in Deutschland geltenden Übergangsmaßnahmen für bestimmte Gemeinschaftsvorschriften über den Umweltschutz

(90/656/EWG)

DER RA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

gestützt auf den 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insbesondere auf Artikel 130 s,

auf Vorschlag der Kommission ⁽¹⁾,nach Stellungnahm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²⁾,nach Stellungnahme des Wirtschafts- und Sozialausschusses ⁽³⁾,

in Erwägung nachstehender Gründe:

Die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hat eine Reihe von Vorschriften für den Umweltschutz erlassen.

Mit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gilt das Gemeinschaftsrecht automatisch auch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iesem Gebiet herrscht eine besondere Situation hinsichtlich der Lage der Umwelt, der es Rechnung zu tragen gilt.

Deutschland muß eine besondere Frist eingeräumt werden, um bestimmte in diesem Gebiet geltende Rechtsvorschriften mit dem Gemeinschaftsrecht in Einklang zu bringen.

Die zu diesem Zweck vorgesehenen Ausnahmeregelungen sind zu befristen und sollten das Funktionieren des gemeinsamen Marktes, insbesondere hinsichtlich der Wettbewerbsbedingungen, so wenig wie möglich stören. Die Ausnahmeregelungen gelten nicht für neue Anlagen.

Die Lage der Umwelt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fordert umfangreiche Sanierungsmaßnahmen, um Qualitätsnormen, Grenzwerte und andere Verpflichtungen zum Schutze der Umwelt gemäß den Rechtsakten der Gemeinschaft einzuhalten.

Die für die Anpassung erforderliche Zeit hängt zum einen von der Ausgangssituation in diesem Gebiet und zum anderen von den erforderlichen Maßnahmen zur Erzielung einer Übereinstimmung mit den Gemeinschaftsanforderungen ab. Die Fristen lassen sich somit nicht einheitlich festlegen.

Die in den unter diese Richtlinie fallenden Bereichen zu treffenden Maßnahmen erfordern häufig nicht nur Änderungen der Produktion, sondern auch die Errichtung neuer Anlagen. Voraussetzungen für diese Maßnahmen sind eine geeignete Verwaltungsstruktur und die Schaffung von Meß- und Kontrollnetzen. Aus diesem Grund sind Fristen von mehreren Jahren erforderlich, um im Bereich des Umweltschutzes eine Situation zu schaffen, die mit dem Gemeinschaftsrecht in Einklang steht.

Angesichts des Kenntnisstandes über die Rechtsvorschriften in de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d über die Lage der Umwelt läßt sich die Art der Anpassungen oder der Umfang der Ausnahmeregelungen nicht definitiv festlegen. Um der weiteren Entwicklung dieser Situation Rechnung zu tragen, ist ein vereinfachtes Verfahren nach Artikel 145 dritter Gedankenstrich des Vertrages vorzusehen —

HAT FOLGENDE RICHTLINIE ERLASSEN:

Artikel 1

Qualität von Oberflächenwasser

(1)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75/440/EWG ⁽⁴⁾ sowie der Richtlinie 79/869/EWG ⁽⁵⁾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den Qualitätsnormen für Oberflächenwasser sowie die Referenzmeßverfahren und die Häufigkeit der Probenahmen und Analysen gemäß diesen Richtlinien bis zum 31. Dezember 1995 nachzukommen ist.

(2) Deutschland unterbreitet der Kommission bis zum 31. Dezember 1992 einen Sanierungsplan, aus dem hervorgeht, mit welchen Maßnahmen die Ziele der in Absatz 1 genannten Richtlinien innerhalb der angegebenen Frist verwirklicht werden können.

⁽¹⁾ ABl. Nr. L 263 vom 26. 9. 1990, S. 42, geändert am 25. Oktober 1990 und am 28. November 1990.

⁽²⁾ Stellungnahme vom 21. November 1990 (noch nicht im Amtsblatt veröffentlicht).

⁽³⁾ Stellungnahme vom 20. November 1990 (noch nicht im Amtsblatt veröffentlicht).

⁽⁴⁾ ABl. Nr. L 194 vom 25. 7. 1975, S. 34.

⁽⁵⁾ ABl. Nr. L 271 vom 29. 10. 1979, S. 44.

Nr. L 353/60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7. 12. 90

Artikel 2**Qualität der Badegewässer**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76/160/EWG⁽¹⁾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den Verpflichtungen gemäß jener Richtlinie bis zum 31. Dezember 1993 nachzukommen ist.

Artikel 3**Ableitung gefährlicher Stoffe**

(1) In Abweichung von den Richtlinien 76/464/EWG⁽²⁾, 82/176/EWG⁽³⁾, 83/513/EWG⁽⁴⁾, 84/156/EWG⁽⁵⁾, 84/491/EWG⁽⁶⁾, 86/280/EWG⁽⁷⁾ und 88/347/EWG⁽⁸⁾ ist Deutschland ermächtigt,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für Industriebetriebe, die dort zum Zeitpunkt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niedergelassen sind, die Bestimmungen dieser Richtlinien erst ab 31. Dezember 1992 anzuwenden.

(2) Ein bestehender Betrieb, der seine Kapazität zur Verwendung der Stoffe erheblich erhöht, ist als neuer Betrieb im Sinne von Artikel 2 Buchstabe g) der Richtlinie 86/280/EWG anzusehen.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im Falle der Richtlinie 86/280/EWG nur für Stoffe, die in Anhang II jener Richtlinie aufgeführt sind.

(4) Die Sonderprogramme nach Artikel 4 der Richtlinie 84/156/EWG und Artikel 5 der Richtlinie 86/280/EWG müssen spätestens bis zum 31. Dezember 1992 erstellt werden und in Kraft treten.

Artikel 4**Qualität von Fischgewässern**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78/659/EWG⁽⁹⁾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den Verpflichtungen gemäß jener Richtlinie bis zum 31. Dezember 1992 nachzukommen ist.

⁽¹⁾ ABl. Nr. L 31 vom 5. 2. 1976, S. 1.

⁽²⁾ ABl. Nr. L 129 vom 18. 5. 1976, S. 23.

⁽³⁾ ABl. Nr. L 81 vom 27. 3. 1982, S. 29.

⁽⁴⁾ ABl. Nr. L 291 vom 24. 10. 1983, S. 1.

⁽⁵⁾ ABl. Nr. L 74 vom 17. 3. 1984, S. 49.

⁽⁶⁾ ABl. Nr. L 274 vom 17. 10. 1984, S. 11.

⁽⁷⁾ ABl. Nr. L 181 vom 4. 7. 1986, S. 16.

⁽⁸⁾ ABl. Nr. L 158 vom 25. 5. 1988, S. 35.

⁽⁹⁾ ABl. Nr. L 222 vom 14. 8. 1978, S. 1.

Artikel 5**Wildlebende Vogelarten**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79/409/EWG⁽¹⁰⁾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die Einführung der nach den Artikeln 3 und 4 jener Richtlinie erforderlichen Schutzmaßnahmen bis zum 31. Dezember 1992 erfolgt.

Innerhalb von sechs Monaten nach dem Datum der deutschen Einigung benennt Deutschland diejenigen Gebiete, die es zu besonderen Schutzgebieten zu erklären beabsichtigt.

Bis zum Wirksamwerden der Schutzmaßnahmen nach den Artikeln 3 und 4 der genannten Richtlinie stellt Deutschland sicher, daß von Maßnahmen der öffentlichen Hand keine negativen Auswirkungen auf das Erhaltungspotential dieser Gebiete ausgehen.

Artikel 6**Schutz des Grundwassers gegen Verschmutzung**

(1)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0/68/EWG⁽¹¹⁾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den Verpflichtungen gemäß jener Richtlinie für die zum Zeitpunkt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bestehenden Einleitungen von Stoffen der Listen I oder II bis zum 31. Dezember 1995 nachzukommen ist.

(2) Die Bestandsaufnahme der Genehmigungen nach Artikel 15 der Richtlinie 80/68/EWG muß so früh wie möglich, in jedem Fall jedoch vor Ablauf der in Artikel 1 genannten Frist, abgeschlossen sein.

(3) Deutschland unterbreitet der Kommission bis zum 31. Dezember 1992 einen Sanierungsplan für das Grundwasser gemäß diesem Artikel, der die für die Verhinderung der Einleitung von Stoffen der Liste I und die Beschränkung der Einleitung von Stoffen der Liste II im Sinne der Richtlinie 80/68/EWG erforderlichen Maßnahmen enthält.

Artikel 7**Qualität von Wasser für den menschlichen Verbrauch**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0/778/EWG⁽¹²⁾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den Verpflichtungen gemäß jener Richtlinie bis zum 31. Dezember 1995 nachzukommen ist. Deutschland bemüht sich jedoch, dieses Ziel bereits zum 31. Dezember 1991 zu erreichen. Sind zu diesem Zeitpunkt die Qualitätsnormen der Richtlinie

⁽¹⁰⁾ ABl. Nr. L 103 vom 25. 4. 1979, S. 1.

⁽¹¹⁾ ABl. Nr. L 20 vom 26. 1. 1980, S. 43.

⁽¹²⁾ ABl. Nr. L 229 vom 30. 8. 1980, S. 11.

17. 12. 90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r. L 353/61

80/778/EWG nicht erreicht, übermittelt Deutschland der Kommission unverzüglich alle zweckdienlichen Angaben einschließlich eines Sanierungsplans, aus dem hervorgeht, durch welche Maßnahmen bis zum 31. Dezember 1995 eine Übereinstimmung mit den Normen der Richtlinie gewährleistet werden kann.

Artikel 8

Luftqualität für Schwefeldioxid und Schwebstaub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0/779/EWG⁽¹⁾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im Bereich jener Richtlinie

- den Verpflichtungen nach Artikel 3 Absatz 1 bis zum 31. Dezember 1991 nachzukommen ist;
- den Verpflichtungen nach Artikel 3 Absatz 2, die auf den 1. Oktober 1982 bzw. den 1. April 1986 befristet sind, bis zum 31. Dezember 1991 bzw. zum 31. Dezember 1995 nachzukommen ist.

Artikel 9

Gefahren schwerer Unfälle

(1)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2/501/EWG⁽²⁾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den Verpflichtungen gemäß jener Richtlinie für Industrietätigkeiten, die dort zum Zeitpunkt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ausübt werden, bis zum 1. Juli 1992 nachzukommen ist.

(2) Für die Industrietätigkeiten nach Absatz 1 kann Deutschland die Vorlage der ergänzenden Erklärung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nach Artikel 9 Absatz 4 der Richtlinie 82/501/EWG und nach Artikel 2 Absatz 2 der Richtlinie 87/216/EWG⁽³⁾ bis zum 1. Juli 1994 vorsehen.

Artikel 10

Bleigehalt der Luft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2/884/EWG⁽⁴⁾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im Bereich jener Richtlinie

- der Verpflichtung nach Artikel 3 Absatz 1 bis zum 31. Dezember 1991 nachzukommen ist;
- der Verpflichtung zur Unterrichtung der Kommission nach Artikel 3 Absatz 2 bis zum 31. Dezember 1991 nachzukommen ist;

— der Verpflichtung zur Übermittlung von Plänen für die schrittweise Verbesserung der Luftqualität nach Artikel 3 Absatz 3 Satz 1 bis zum 31. Dezember 1992 nachzukommen ist;

— der Verpflichtung zur Einhaltung der in der Richtlinie festgesetzten Grenzwerte nach Artikel 3 Absatz 3 dritter Satz bis zum 1. Juli 1994 nachzukommen ist.

Artikel 11

Luftverunreinigung durch Industrieanlagen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4/360/EWG⁽⁵⁾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als Zeitpunkt für die Definition von bestehenden Anlagen nach Artikel 2 Nummer 3 jener Richtlinie der Zeitpunkt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herangezogen wird.

Artikel 12

Luftqualitätsnormen für Stickstoffdioxid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5/203/EWG⁽⁶⁾ ist Deutschland ermächtigt,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Bereich jener Richtlinie vorzusehen, daß

- der Verpflichtung zur Einhaltung des Grenzwertes für die Stickstoffkonzentration in der Luft nach Artikel 3 Absatz 1 bis zum 31. Dezember 1991 nachzukommen ist;
- die Fristen nach Artikel 3 Absatz 2 bis zum 31. Dezember 1991 ausgedehnt werden;
- die Frist für die Übermittlung von Verbesserungsplänen nach Artikel 3 Absatz 2 Unterabsatz 2 Satz 1 am 31. Dezember 1992 endet;
- die Frist nach Artikel 3 Absatz 2 bis zum 31. Dezember 1995 verlängert wird.

Artikel 13

Altölbeseitigung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7/101/EWG⁽⁷⁾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im Bereich jener Richtlinie als Zeitpunkt für die Definition von bestehenden Anlagen nach Artikel 3 der Zeitpunkt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herangezogen wird.

(¹) ABl. Nr. L 229 vom 30. 8. 1980, S. 30.

(²) ABl. Nr. L 230 vom 5. 8. 1982, S. 1.

(³) ABl. Nr. L 85 vom 28. 3. 1987, S. 36.

(⁴) ABl. Nr. L 378 vom 31. 12. 1982, S. 15.

(⁵) ABl. Nr. L 188 vom 26. 7. 1984, S. 20.

(⁶) ABl. Nr. L 87 vom 27. 3. 1985, S. 1.

(⁷) ABl. Nr. L 42 vom 11. 1. 1987, S. 43.

Nr. L 353/62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7. 12. 90

Artikel 14**Umweltverschmutzung durch Asbest**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87/217/EWG ⁽¹⁾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im Bereich jener Richtlinie

- den Verpflichtungen nach Artikel 14 Absatz 1 bis zum 31. Dezember 1991 nachzukommen ist;
- den Verpflichtungen nach Artikel 14 Absatz 2 bis zum 30. Juni 1993 nachzukommen ist.

Artikel 15**Begrenzung der Schadstoffemissionen von Großfeuerungsanlagen**

(1) In Abweichung der Richtlinie 88/609/EWG ⁽²⁾ kann Deutschland für das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rsehen, daß im Bereich jener Richtlinie

- in Artikel 2 Nummern 9 und 10 anstelle des Datums 1. Juli 1987 der 1. Juli 1990 gilt;
- für die Aufstellung von Programmen zur schrittweisen Verringerung der Emissionen nach Artikel 3 Absatz 1 anstelle des Datums des 1. Juli 1990 der 1. Juli 1992 gilt.

(2) In Anhang I der Richtlinie 88/609/EWG werden die Angaben für Deutschland wie folgt geändert:

	„0	1	2	3	4	5	6	7	8	9
Mingbindatasten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Deutschland	5000	3000 ⁽³⁾	2000	1500	-40 ⁽³⁾	-60	-70	⁽¹⁾	—	—

⁽¹⁾ Die Werte in dieser Rubrik müssen von Deutschland ab dem 1. Januar 1996 eingehalten werden.“

(3) In Anhang II der Richtlinie 88/609/EWG werden die Angaben für Deutschland wie folgt geändert:

	„0	1	2	3	4	5	6
Mingbindatasten		1993	1998	1993	1998	1993	1998
Deutschland	1090	872 ⁽⁴⁾	654	-20	-40	—	—

⁽⁴⁾ Die Werte in dieser Rubrik müssen von Deutschland ab dem 1. Januar 1996 eingehalten werden.“

Artikel 16**Abfälle**

(1) In Abweichung von Artikel 8 der Richtlinie 75/442/EWG ⁽¹⁾ und von Artikel 9 der Richtlinie 78/319/EWG ⁽⁴⁾

kann Deutschland außer im Falle neuer Anlagen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treffen, um den betreffenden Verpflichtungen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is zum 31. Dezember 1995 nachzukommen.

(2) Deutschland unterbreitet der Kommission bis zum 31. Dezember 1991 Sanierungspläne, um den Anforderungen von Artikel 6 der Richtlinie 75/442/EWG und Artikel 12 der Richtlinie 78/319/EWG nachzukommen und die in Absatz 1 genannte Frist einzuhalten.

⁽¹⁾ ABl. Nr. L 85 vom 28. 3. 1987, S. 40.

⁽²⁾ ABl. Nr. L 336 vom 7. 12. 1988, S. 1.

⁽³⁾ ABl. Nr. L 194 vom 25. 7. 1975, S. 39.

⁽⁴⁾ ABl. Nr. L 84 vom 31. 3. 1978, S. 43.

17. 12. 90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r. L 353/63

Artikel 17**Unterrichtung**

Deutschland teilt der Kommission unverzüglich die Maßnahmen mit, die es in Anwendung der Artikel 1 bis 16 ergriffen hat. Die Kommission unterrichtet die anderen Mitgliedstaaten und das Europäische Parlament.

Artikel 18

(1) Es kann beschlossen werden, die Maßnahmen, die Gegenstand dieser Richtlinie sind, bei offenkundigen Lücken anzupassen oder technische Anpassungen daran vorzunehmen.

(2) Diese Anpassungen müssen der einheitlichen Anwendung der gemeinschaftlichen Regelung in dem durch diese Richtlinie abgedeckten Bereich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nter Berücksichtigung der besonderen Lage in diesem Gebiet und der besonderen Schwierigkeiten bei der Durchführung dieser Regelung dienen.

Sie müssen den Grundsätzen dieser Regelung Rechnung tragen und in engem Sachzusammenhang mit einer der in dieser Richtlinie vorgesehenen Ausnahmeregelungen stehen.

(3) Die in Absatz 1 genannten Maßnahmen können beschlossen werden:

- für Artikel 1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1 der Richtlinie 79/869/EWG;
- für Artikel 2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1 der Richtlinie 76/160/EWG;
- für Artikel 4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4 der Richtlinie 78/659/EWG;
- für Artikel 5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7 der Richtlinie 79/409/EWG;
- für Artikel 7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5 der Richtlinie 80/778/EWG;
- für Artikel 8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4 der Richtlinie 80/779/EWG;
- für Artikel 9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6 der Richtlinie 82/501/EWG;
- für Artikel 10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1 der Richtlinie 82/884/EWG;

- für Artikel 12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4 der Richtlinie 85/203/EWG;
- für Artikel 14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2 der Richtlinie 87/217/EWG;
- für Artikel 16 gemäß dem Verfahren nach Artikel 19 der Richtlinie 78/319/EWG.

(4) Für die Fälle, für welche die in Absatz 3 genannten Verfahren nicht gelten, können die in Absatz 1 genannten Maßnahmen nach Einberufung eines Ad-hoc-Ausschusses, bestehend aus Vertretern der Mitgliedstaaten und unter dem Vorsitz der Kommission, nach folgendem Verfahren beschlossen werden.

Der Vertreter der Kommission unterbreitet dem Ausschuß einen Entwurf der zu treffenden Maßnahmen. Der Ausschuß gibt seine Stellungnahme zu diesem Entwurf innerhalb einer Frist ab, die der Vorsitzende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ringlichkeit der betreffenden Frage festsetzen kann.

Die Stellungnahme wird mit der Mehrheit abgegeben, die in Artikel 148 Absatz 2 des Vertrages für die Annahme der vom Rat auf Vorschlag der Kommission zu fassenden Beschlüsse vorgesehen ist. Bei der Abstimmung im Ausschuß werden die Stimmen der Vertreter der Mitgliedstaaten gemäß vorgenanntem Artikel gewogen. Der Vorsitzende nimmt an der Abstimmung nicht teil.

Die Kommission erläßt die beabsichtigten Maßnahmen, wenn sie mit der Stellungnahme des Ausschusses übereinstimmen.

Stimmen die beabsichtigten Maßnahmen mit der Stellungnahme des Ausschusses nicht überein oder liegt keine Stellungnahme vor, so unterbreitet die Kommission dem Rat unverzüglich einen Vorschlag für die zu treffenden Maßnahmen. Der Rat entscheidet mit qualifizierter Mehrheit.

Hat der Rat nach Ablauf einer Frist von drei Monaten von seiner Befassung an keinen Beschluß gefaßt, so werden die vorgeschlagenen Maßnahmen von der Kommission erlassen.

(5) Die Anpass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können nur innerhalb der in dieser Richtlinie vorgesehenen Höchstfristen für die vollständige Anwendung der betreffenden Richtlinien vorgenommen werden; sie sind auf die entsprechenden Zeitpunkte befristet. Die auf der Grundlage des vorliegenden Artikels möglichen Ergänzungen können nur bis zum 31. Dezember 1992 beschlossen werden; sie sind auf die Zeitpunkte befristet, die in der vorliegenden Richtlinie für die vollständige Anwendung der betreffenden Richtlinien vorgesehen sind, oder aber, wo keine derartige Frist gesetzt ist, auf den 31. Dezember 1995.

(6) Falls es sich als unerlässlich erweist, eine in dieser Richtlinie vorgesehene Höchstfrist bei der Anwendung einer Ausnahmeregelung zu verlängern, kann nach dem in den Absätzen 3 und 4 vorgesehenen Verfahren ein späterer Termin festgelegt werden, der jedoch nicht nach dem 31. Dezember 1995 liegen darf.

Nr. L 353/64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7. 12. 90

(7) Jeder Mitgliedstaat kann die Kommission befassen, wenn Schwierigkeiten auftreten. Die Kommission prüft die Frage umgehend und legt ihre Schlußfolgerungen, gegebenenfalls zusammen mit geeigneten Maßnahmen, vor.

Artikel 19

Diese Richtlinie ist an die Mitgliedstaaten gerichtet.

Geschehen zu Brüssel am 4. Dezember 1990.

Im Namen des Rates

Der Präsident

G. DE MICHELIS

Nummer 190b

17. 12. 90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r. L 353/79

RICHTLINIE DES RATES

vom 4. Dezember 1990

über die in Deutschland geltenden Übergangsmaßnahmen für bestimmte Gemeinschaftsvorschriften über den Umweltschutz im Zusammenhang mit dem Binnenmarkt

(90/660/EWG)

DER RA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

gestützt auf den Vertrag zur Gründung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insbesondere auf Artikel 100a,

auf Vorschlag der Kommission,

in Zusammenarbeit mit dem Europäischen Parlament (1),

nach Stellungnahme des Wirtschafts- und Sozialausschusses (2),

in Erwägung nachstehender Gründe:

Die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hat eine Reihe von Vorschriften zum Schutz der Umwelt erlassen.

Mit der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gilt das Gemeinschaftsrecht automatisch auch in de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gesichts der besonderen Situation in diesem Gebiet erweist es sich als notwendig, Deutschland eine besondere Frist einzuräumen, um bestimmte in diesem Gebiet geltende Rechtsvorschriften mit dem Gemeinschaftsrecht in Einklang zu bringen.

Dies gilt insbesondere für das durch die Richtlinien über die Einstufung, Verpackung und Kennzeichnung gefährlicher Stoffe geschaffene Gemeinschaftssystem sowie für den Schwefelgehalt bestimmter flüssiger Brennstoffe.

Die zu diesem Zweck möglicherweise vorgesehenen Ausnahmeregelungen sind zu befristen und sollten das Funktionieren des Gemeinsamen Marktes so wenig wie möglich beeinträchtigen.

Angesichts des Kenntnisstandes über die in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ltenden Rechtsvorschriften und über die Lage der Umwelt läßt sich der

Umfang dieser Ausnahmeregelungen nicht definitiv festlegen. Um der weiteren Entwicklung dieser Situation Rechnung tragen zu können, ist im Einklang mit Artikel 145 dritter Gedankenstrich des Vertrages ein vereinfachtes Verfahren vorzusehen —

HAT FOLGENDE RICHTLINIE ERLASSEN:

Artikel 1

(1) In Abweichung von der Richtlinie 67/548/EWG des Rates vom 27. Juni 1967 zur Angleich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für die Einstufung, Verpackung und Kennzeichnung gefährlicher Stoffe (3), zuletzt geändert durch die Richtlinie 90/517/EWG (4), kan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treffen, um die Einhaltung der Bestimmungen der genannten Richtlinie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is zum 31. Dezember 1992 zu gewährleisten.

(2)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trifft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um sicherzustellen, daß die mit der Richtlinie 67/548/EWG nicht übereinstimmenden Stoffe und Zubereitungen nicht in der Gemeinschaft, mit Ausnahme des Gebiet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Verkehr gebracht werden. Diese Maßnahmen müssen mit dem Vertrag, insbesondere mit den Zielen nach Artikel 8a, in Einklang stehen und dürfen nicht zu Kontrollen oder Formalitäten an den Grenzen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führen.

Stoffe, die in der in Artikel 13 der Richtlinie 67/548/EWG genannten Liste (EINECS) nicht aufgeführt sind, müssen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jener Richtlinie notifiziert werden. Die Bedingungen für die Notifizierung von Stoffen, die vor dem 18. September 1981 auf dem Mark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erhältlich waren und nicht in der EINECS-Liste genannt sind, werden von der Kommission beschlossen.

Artikel 2

(1) In Abweichung von Artikel 2 Absatz 1 der Richtlinie 75/716/EWG des Rates vom 24. November 1975 zur

(1) ABl. Nr. L 263 vom 26. 9. 1990, geändert am 25. Oktober 1990 und 25. November 1990.

(2) Stellungnahme vom 24. Oktober 1990 (noch nicht im Amtsblatt veröffentlicht) und Beschluß vom 21. November 1990 (noch nicht im Amtsblatt veröffentlicht).

(3) Stellungnahme vom 20. November 1990 (noch nicht im Amtsblatt veröffentlicht).

(3) ABl. Nr. 196 vom 16. 8. 1967, S. 1.

(4) ABl. Nr. L 287 vom 19. 10. 1990, S. 37.

Nr. L 353/80

Amtsblat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17. 12. 90

Angleichung der Recht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en Schwefelgehalt bestimmter flüssiger Brennstoffe (1), geändert durch die Richtlinie 87/219/EWG (2), kan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ugunsten der zum Zeitpunkt der Einigung dort niedergelassenen Erzeuger Ausnahmen von der Verpflichtung zur Einhaltung des Grenzwerts für den Schwefelgehalt von Gasöl zulassen.

Eine solche Gestattung darf von den deutschen Behörden nur erteilt werden, wenn die Einhaltung des Grenzwerts für Schwefelgehalt von Gasöl für einen Hersteller eine unzumutbare Härte bedeutet. Für Werte, die hinsichtlich des Schwefelgehalts den Grenzwert von 0,5 % überschreiten, darf keine Genehmigung erteilt werden. Die Genehmigungen sind zu befristen und müssen spätestens am 31. Dezember 1994 auslaufen.

(2)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rgreift die erforderlichen Maßnahmen, um sicherzustellen, daß die mit der Richtlinie 75/716/EWG nicht übereinstimmenden Gasöle nicht in der Gemeinschaft, mit Ausnahme des Gebiet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n Verkehr gebracht werden. Diese Maßnahmen müssen mit dem Vertrag, insbesondere mit den Zielen des Artikels 8a, in Einklang stehen und dürfen nicht zu Kontrollen oder Formalitäten zwischen den Mitgliedstaaten führen.

Artikel 3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teilt der Kommission unverzüglich die Maßnahmen mit, die sie in Anwendung von Artikel 1 und 2 ergriffen hat; die Kommission unterrichtet die übrigen Mitgliedstaaten und das Europäische Parlament.

Artikel 4

(1) Gemäß dem Verfahren des Artikels 21 der Richtlinie 67/548/EWG kann beschlossen werden, die Maßnahmen,

die Gegenstand der vorliegenden Richtlinie sind, im Falle offenkundiger Lücken anzupassen oder technische Anpassungen daran vorzunehmen.

(2) Diese Anpassungen müssen eine kohärente Anwendung der in Artikel 1 und 2 genannten Richtlinie im Gebiet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gewährleisten und gleichzeitig der speziellen Situation in diesem Gebiet und den besonderen Schwierigkeiten im Zusammenhang mit der Anwendung jener Richtlinie Rechnung tragen.

Sie müssen den Grundsätzen der genannten Richtlinien Rechnung tragen und in engem Sachzusammenhang mit einer der in der vorliegenden Richtlinie vorgesehenen Ausnahmeregelungen stehen.

(3) Die in Absatz 1 genannten Maßnahmen können bis zum 31. Dezember 1992 ergriffen werden. Sie sind jeweils auf diesen Zeitpunkt befristet; für die in Artikel 2 genannte Richtlinie ist der maßgebliche Zeitpunkt jedoch der 31. Dezember 1994.

(4) Jeder Mitgliedstaat kann die Kommission befragen, wenn Schwierigkeiten auftreten. Die Kommission prüft die Frage im Dringlichkeitsverfahren und legt ihre Schlußfolgerungen, gegebenenfalls zusammen mit geeigneten Maßnahmen, vor.

Artikel 5

Diese Richtlinie ist an die Mitgliedstaaten gerichtet.

Geschehen zu Brüssel am 4. Dezember 1990.

Im Namen des Rates

Der Präsident

G. DE MICHELIS

(1) ABl. Nr. L 307 vom 27. 11. 1975, S. 22.

(2) ABl. Nr. L 91 vom 3. 4. 1987, S. 19.

Nummer 191**Informationsbroschüren/Publikationen zum Themenkreis Umweltschu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Bundesministerium für Umweltschutz,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Kennedyallee 5
W-5300 Bonn 2
Telefon 02 28/3 05-0

Außenstelle Berlin
Schiffbauerdamm 15
O-1040 Berlin
Telefon 0 30/2 31 42-0

Reihe: „Umweltpolitik“

- Deutsches Umweltrecht auf der Grundlage des Einigungsvertrages
- Orientierungshilfen für den ökologischen Aufbau in den neuen Ländern:
Wichtige Informationsquellen und Starthilfen des Bundes
- Ökologische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 Beschluß der 37. Umweltministerkonferenz am 21./22. November 1991 in Leipzig —
- Ermittlung und Bewertung von CO₂-Minderungspotential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Reihe „Ökologischer Aufbau“

- Privatwirtschaftliche Realisierung der Abwasserentsorgung
 - Erfahrungsbericht
 - Musterverträge
- Arbeitsförderung Umwelt Ost
- Umwelt und Verkehr
- Eckwerte der ökologischen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den neuen Ländern
- Wegweiser zu Starthilfen im Umweltschutz
- 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für die Umwelt
- Leifaden zur Abwasserbeseitigung
- Privatisierung der kommunalen Abwasserentsorgung — Ja oder Nein?

Weitere Publikationen

- Umweltunion
36 Umweltschutzprojek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 Informationsblatt
Einschaltung privater Unternehmen für die öffentliche Abwasserentsorgung — Alternativauswahl und Projektentwicklung —

Umweltbundesamt

Bismarckplatz 1
W-1000 Berlin 33
Telefon 0 30/89 03-0

Mauerstraße 52
O-1080 Berlin
Telefon 0 30/2 31 45-5

Reihe „Texte“

- 21/90 Ökologische Ressourcenplanung Berlin und Umland — Vorstudie —, DM 10,—
- 29/91 Möglichkeiten zur Sanierung der Abwasserhältnisse bei den kommunalen und industriellen Direkteinleitern in die Oberflächengewässer der neuen Bundesländer — industrielle Direkteinleitungen — (Textband), DM 10,—
- 30/91 Möglichkeiten zur Sanierung der Abwasserhältnisse bei den kommunalen und industriellen Direkteinleitern in die Oberflächengewässer der neuen Bundesländer — industrielle Direkteinleitungen — (Anhang), DM 10,—
- 31/91 Möglichkeiten zur Sanierung der Abwasserhältnisse bei den kommunalen und industriellen Direkteinleitern in die Oberflächengewässer der neuen Bundesländer — kommunale Abwässer — (Textband), DM 10,—
- 32/91 Möglichkeiten zur Sanierung der Abwasserhältnisse bei den kommunalen und industriellen Direkteinleitern in die Oberflächengewässer der neuen Bundesländer — kommunale Abwässer — (Anhang), DM 10,—
- 33/91 Braunkohlebergbau — Probleme und Methoden bei der Gestaltung von Folgelandschaften, DM 10,—
- 35/91 Asbesteinsatz in der ehemaligen DDR, DM 10,—
- 41/91 Sofortprogramm Bitterfeld, DM 10,—

- 46/91 Ökologischer Sanierungs- und Entwicklungsplan Niederlausitz — Vorstudie, DM 10,—
- 53/91 Die Umweltsituation in der DDR im Urteil von Besuchern der Leipziger Herbstmesse im September 1990, DM 10,—
- 7/92 Analyse und Auswertung des vorhandenen Datenmaterials zur Bewertung der Wasserbeschaffenheit der Oder, DM 10,—
- 26/92 Ökologisches Sanierungs- und Entwicklungskonzept Leipzig/Bitterfeld/Halle/Merseburg
Band A 1: Umweltbereiche, DM 10,—
Band A 2: Umweltbereiche, DM 10,—
Band B: Ökonomie, Umweltrecht, Umsetzung, Vollzug, DM 10,—
- 35/92 Immissionsüberwachung in der DDR
Veröffentlichter Teilbericht zu „Feststellung und Bewertung von Immissionen — Leitfaden zur Immissionsüberwachung in Deutschland“, DM 15,—
- 37/92 Abfallentsorgung durch Wertstofffassung und Wertstoffverwertung mittels Errichtung von Wertstoffhöfen, DM 15,—
- 39/92 Ökologisches Sanierungskonzept für den Großraum Rostock, DM 10,—
- 40/92 Leitfaden zur Erstellung von Antragsunterlagen und zur Durchführung des Zulassungsverfahrens bei Abfallentsorgungsunterlagen (von Lahmeyer International), 1992, DM 15,—

Reihe: UNESCO-Verbindungsstelle für Umwelterziehung im Umweltbundesamt

- Berufliche Fort- und Weiterbildung im Umweltschutz
Das Veranstaltungsangebot in den neu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öffentlichung: Ende '92, ca. DM 10,—

Weitere Publikationen

- Gründung und Einsatz kommunaler Gesellschaften für die Lösung von Sanierungs- und Entwicklungsaufgaben
— Informationsblatt für leitende Mitarbeiter in den Kommunalverwaltungen der neuen Bundesländer —

Berlin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schutz von Berlin
Lindenstraße 20—25
W-1000 Berlin 61
Telefon 0 30/2 58 60

Publikationen

- Ökologisches Sanierungsprogramm für Berlin (ÖSP) — Arbeitsplätze durch Umweltschutz — 1. Stufe: Ökologisches Sofortprogramm (Kurzbeschreibung)
- Förderfibel Energie und Umwelt; in der Reihe: Neue Energiepolitik für Berlin, Heft 6, Berlin 1992
- Energiekonzept Berlin, Entwurf für die Öffentlichkeitsbeteiligung; in der Reihe: Neue Energiepolitik für Berlin, Heft 9, Berlin 1992
- Umweltentlastungskonzept Zentrum — Analyse der Umweltsituation — Immissionsschwerpunkte. Vorrangige Handlungsfelder — Entlastungsmaßnahmen. Bd. I: Ergebnisse; in der Reihe: Forschungsvorhaben im Auftrag der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schutz o.D.
- Programm zur Förderung ökologischen Wirtschaftens, Berlin o.D.

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aumordnung (MUNR) des Landes Brandenburg

Albert-Einstein-Straße 42—46
O-1561 Potsdam
Telefon 03 31/3 15-0

Publikationen

- Umweltjournale 1—5 (jew. ca. 20 Seiten)
- Förderrichtlinie 1991
- Jahreskalender 1992
- Faltblatt Schorfheide-Chorin (2. Auflage)
- Faltblatt Naturpark Märkische Schweiz
- Faltblatt gepl. Nationalpark Untere Oder (2. Auflage)
- Faltblatt Spreewald
- Faltblatt „Brandenburger Umwelten“
- Empfehlung zu Dualem Abfallsystem
- Empfehlung zur Renaturierung von Fließgewässern
- Umwelt-Kinder-Garten
- Smog-Faltblatt
- Ozon-Faltblatt
- Broschüre „Wasser in Brandenburg“
- Anleitung zur Erstellung von Emissionserklärungen
- Förderrichtlinie 1992

**Ministerium für Umwelt, Natur und Forst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Schloßstraße 6—8
O-2750 Schwerin
Telefon 03 85/57 19-0

Publikationen

- Umweltbericht des Landes Mecklenburg-Vorpommern 1991
- Investitionen in die Zukunft
Übersicht über Finanzierungshilfen zur Förderung von Umweltschutzmaßnahmen in Mecklenburg-Vorpommern
- Die Umweltministerin stellt sich vor
- Schütze die Küste
- Biotopkartieranleitung Mecklenburg-Vorpommern
Herausgeber: Landesamt für Umwelt und Natur, Mecklenburg-Vorpommern
- Wanderkarte „Müritz-Nationalpark“
Bezug: Informationsstände des Nationalparks, örtlicher Buchhandel, DM 5,—
- Buch „National- und Naturparkführer Mecklenburg-Vorpommern“, erschienen im Demmler-Verlag unter der ISBN-Nr.: 3-910150-11-X
Bezug: Nationalparkverwaltung oder örtlicher Buchhandel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Umwelt und Landesentwicklung**

Ostra-Allee 23
O-8010 Dresden
Telefon 03 51/48 62-0

Publikationen

- Umweltbericht 1991
Freistaat Sachsen
- Investieren in Sachsens Umwelt — Investitionen für die Zukunft
Finanzierungshilfen im Freistaat Sachsen zur Förderung von Umweltschutzinvestitionen

**Ministerium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s Landes Sachsen-Anhalt**

Pfälzer Platz 1
O-3024 Magdeburg
Telefon 03 91/5 83 61-4

Publikationen

- Umweltbericht 1990 und 1991 des Landes Sachsen-Anhalt
- Sachsen-Anhalt
Eine Wirtschaftsregion gewinnt neues Profil
Nationales Sonderprogramm für den Raum Halle/Bitterfeld/Merseburg

- Faltblätter: Umwelt in Zahlen 1990 und 1992 Sachsen-Anhalt
- Immissionsschutzbericht 1990 und 1991
- Gewässerschutzbericht 1991
- Strahlenschutzbericht 1992
- Broschüre: Umweltverwaltungssystem
- Broschüre: Fördermittel
- Broschüre: Abfallwirtschaftskonzept des Landes Sachsen-Anhalt
- Broschüre: Böden (Handlungsempfehlungen für den Umgang mit kontaminierten Böden)
- Broschüre: Analyse der Lärmbelastung und Maßnahmen zur Reduzierung im Land Sachsen-Anhalt
- Broschüre: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ällen im Land Sachsen-Anhalt
- Faltblatt: Informationen zur Smog-Verordnung
- Faltblatt: Asbest
- Faltblatt: Information zu Umweltbelastungen im Umfeld der Kupferhütte Ilsenburg
- Faltblatt: Die Bestimmungen des Abfallgesetzes im Land Sachsen-Anhalt
- Faltblatt: Information zum Brennwert-Heizkessel
- Faltblatt: Storchenhof Loburg — Naturschutzeinrichtung des Ministeriums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s Landes Sachsen-Anhalt
- Faltblatt: Information zum Baustellenlärm
- Faltblatt: Organisation des Ministeriums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s Landes Sachsen-Anhalt
- Faltblatt: Für ein neues Land: Der Sanierungsverbund e.V. Mansfelder Land
- Faltblatt: Freiwilliges Ökologisches Jahr
- Faltblatt: Naturpark Dübener Heide
- Plakat: Naturpark Drömling
- Plakat: Nationalpark „Hochharz“
- Plakat: Biosphärenreservat „Mittlere Elbe“
- Plakat: Naturpark Dübener Heide

**Ministerium für Umwelt
des Landes Thürin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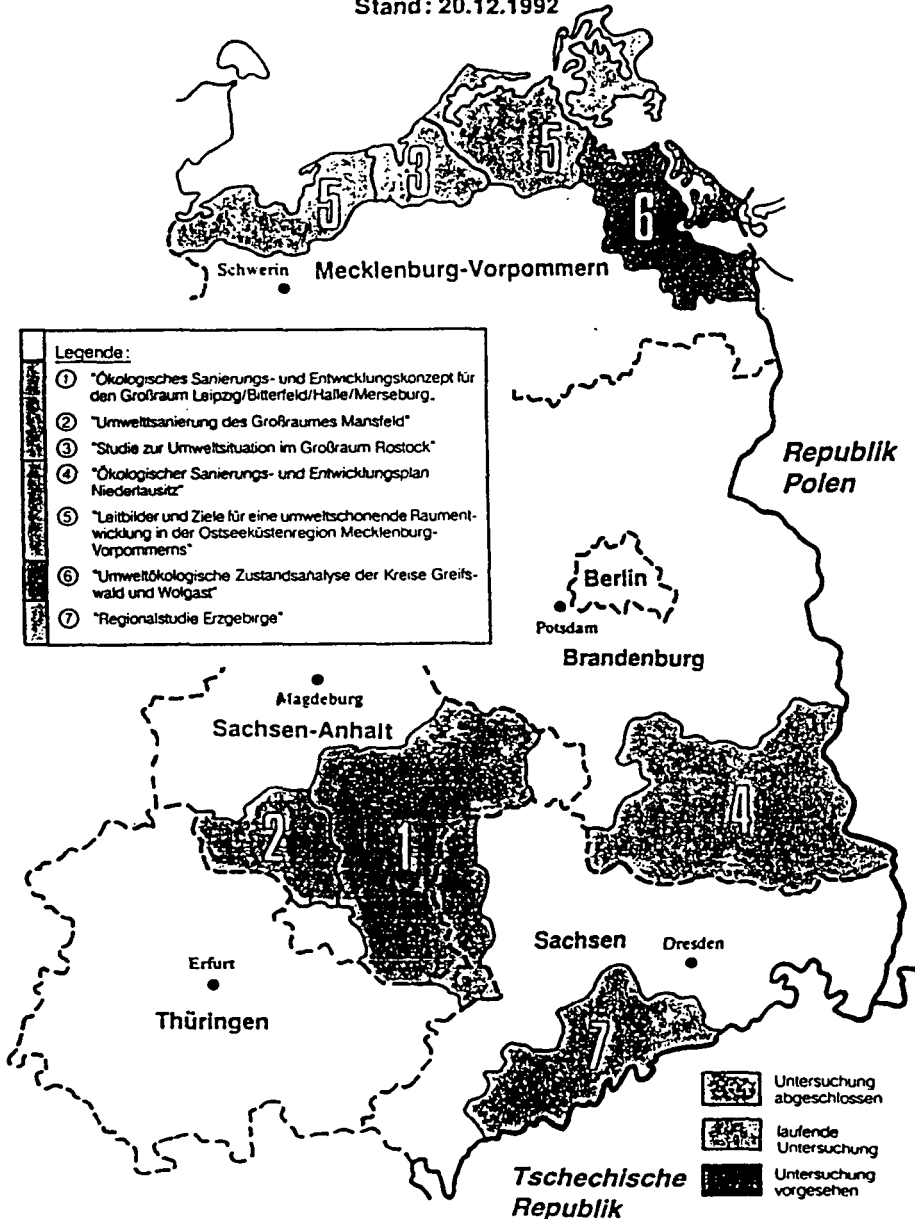
Richard-Breslau-Straße 11a
O-5010 Erfurt
Telefon 03 61/2 38 63; 2 39 91

Publikationen

- Umweltbericht Thüringen 1991 (Juni 1992)
- Kompostfibel (Juli 1992)
- Förderfibel (September 1992)
- Smog-Info (vor Mai 1992)
- Asbest-Fibeln (vor Mai 1992)

Nummer 192

**Ökologische Untersuchungsgebiete In den neuen Ländern
(Studien des BMU)
Stand: 20.12.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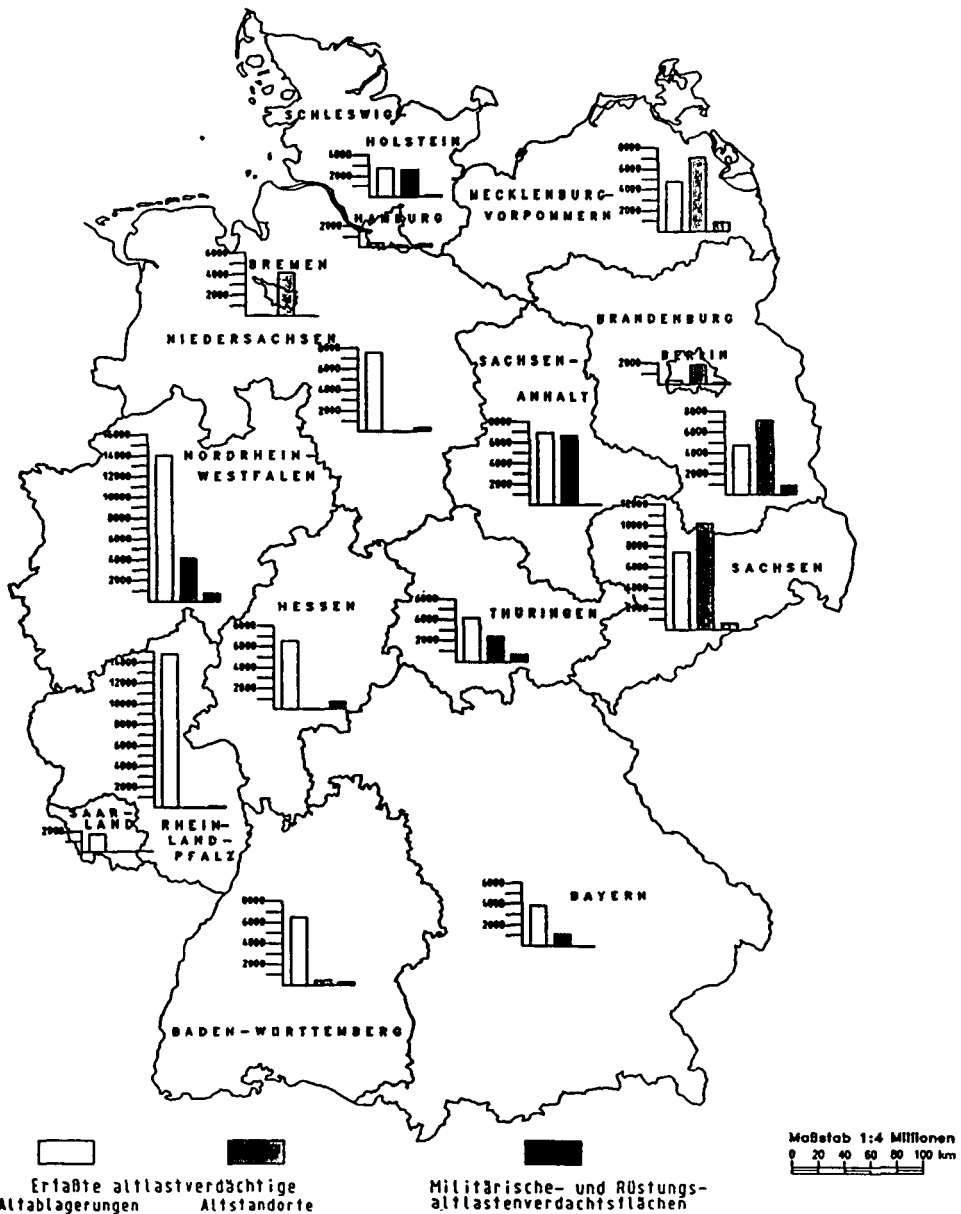
Bundesumweltministerium
-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

Nummer 193

Boden gr.-nr.: IV 21

Bo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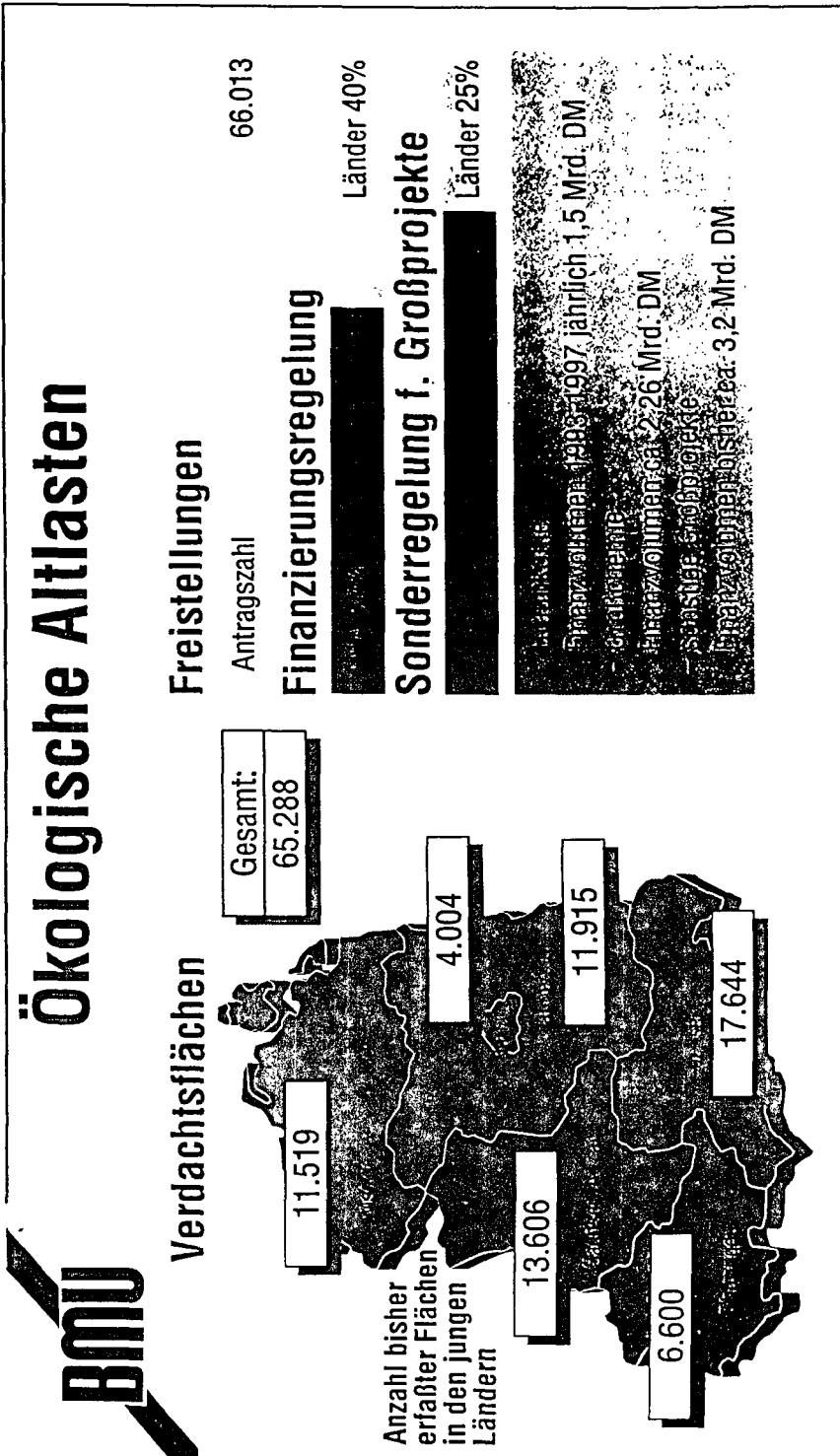
Anzahl erfaßter Altlastenverdachtsfläch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15.01.1993



Quelle: Umweltbundesamt nach Angaben der Bundesländer

UMPLIS
Methodenbank
Umwelt

Daten zur Umwelt 1993 ¹
Umweltbundesamt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ummer 195



Ökologische Atlanten

Großprojekte im Sinne der Finanzierungsregelung für Unternehmen im Bereich der Treuhandanstalt

Kostenverteilung	THA 75%	geschätztes Finanzvolumen in Mio DM
	Länder 25%	
Braunkohle		7.500*
Andere bisher festgelegte Großprojekte		
Berlin	Region „Industriegebiet Spree“ (Adlershof, Rummelsburg, Oberschöneeweide, Niederschöneeweide, Johannisthal)	1.500
Brandenburg	Region „Kreis Oranienburg“ (Hennigsdorf, Velten, Birkenwerder, Oranienburg)	380
Mecklenburg-Vorpommern	Neptun-Warnow-Werft, Rostock MTW Schiffswerft, Wismar	150 100
Sachsen	SAXONIA Freiberg Olefinwerke Böhlen-Lippendorf	140 130
Sachsen-Anhalt	Erdöl/Erdgas-Gommern (Förderfeld Salzwedel/Peckensen) Mansfeld AG (Rohhütte Helbra, Kupfer-Silber-Hütte) Chemie AG Filmfabrik Wolfen/Wolterner VV AG Buna AG Leuna-Werke AG Hydrierwerk Zeitz GmbH	250 200 1.000 1.000 120 140
Thüringen	Kall-Werra (Merkers) und Kall-Südharz AG (Sondershausen, Bleicherode, Sollstedt, Beechschöneweide <i>Bischolmsheide</i>)	280

*bis 1997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ummer 196

Ökologische Atlanten

Sanierungsbetriebe der Wismut GmbH

Sanierungsvorhaben Wismut GmbH:

- Flächenumfang der Wismut-Betriebe Ronneburg, Seelingstädt, Aue und Königstein: ca. 32 qkm, davon voraussichtlich ca. 60% sanierungsbedürftig
- Sanierungszeitraum: 10 bis 15 Jahre
- Finanzvolumen: 13 Mrd. DM Bundesmittel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Ökologische Altlas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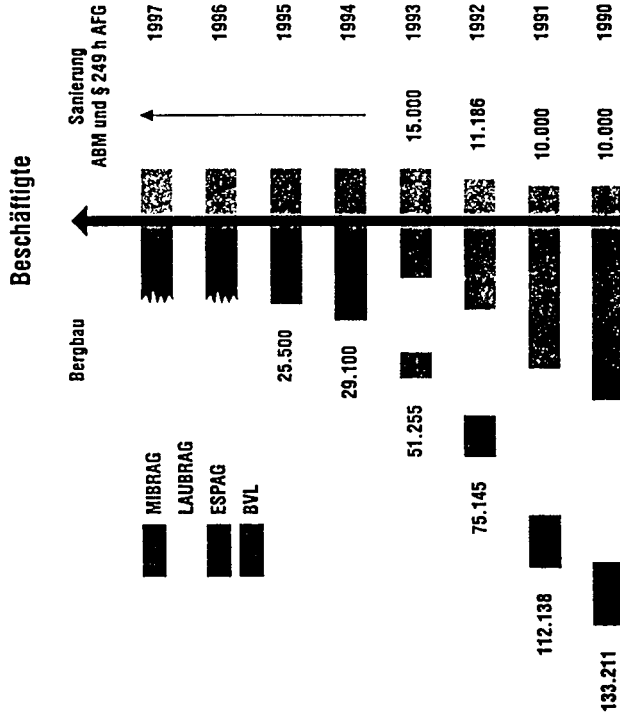
Großprojekt Braunkohlesanierung
7,5 Mrd DM bis 1997



Braunkohleregionen in den jungen Ländern



- 1 Niederlausitzer Revier (LAUBRAG/ESPAG BVL)
- 2 Mitteldeutsches Revier (MIBR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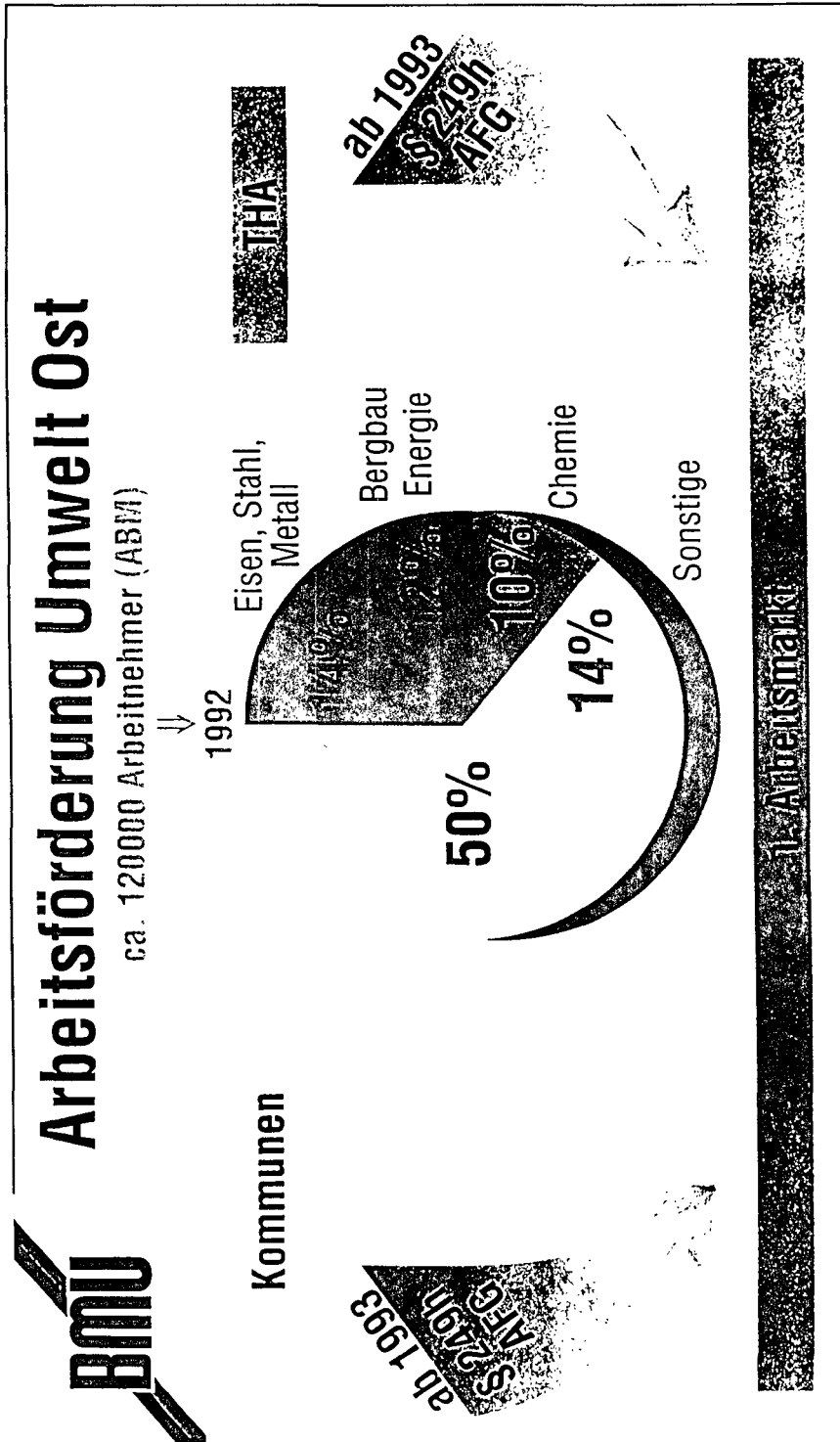


Sanierungsvorgaben durch Bund-Länder-Steuerungsgruppe (Federführung BMU)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ummer 198



Logo of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BA) and the text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ummer 199a

Die 14 neuen Naturschutzgebiet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aturschutzgebiete

Naturschutzgebiete sind rechtsverbindlich festgesetzte Gebiete, in denen ein besonderer Schutz von Natur und Landschaft in ihrer Ganzheit oder in einzelnen Teilen

1. zur Erhaltung von Lebensgemeinschaften oder Biotopen bestimmter wild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2. aus wissenschaftlichen, naturgeschichtlichen oder landeskundigen Gründen oder
3. wegen ihrer Seltenheit, besonderen Eigenart oder hervorragenden Schönheit

erforderlich ist.

Nationalparke

Nationalparks sind rechtsverbindlich festgesetzte einheitlich zu schützende Gebiete, die

1. großräumig und von besonderer Eigenart sind,
2. im überwiegenden Teil ihres Gebietes die Voraussetzungen eines Naturschutzgebietes erfüllen,
3. sich in einem von Menschen nicht oder wenig beeinflussten Zustand befinden und
4. vornehmlich der Erhaltung eines möglichst artenreichen heimischen Tier- und Pflanzenbestandes dienen.

Landschaftsschutzgebiete

Landschaftsschutzgebiete sind rechtsverbindlich festgelegte Gebiete, in denen ein besonderer Schutz von Natur und Landschaft

1. zur Erhaltung oder Wiederherstellung der Leistungsfähigkeit des Naturhaushaltes oder der Nutzungsfähigkeit der Naturgüter,
2. wegen der Vielfalt, Eigenarten oder Schönheit des Landschaftsbildes oder
3. wegen ihrer besonderen Bedeutung für die Erholung

erforderlich ist.

Naturparke

Naturparke sind einheitlich zu entwickelnde und zu pflegende Gebiete, die

1. großräumig sind,
2. überwiegend Landschaftsschutzgebiete oder Naturschutzgebiete sind,
3. sich wegen ihrer landschaft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Erholung besonders eignen und
4. nach den Grundsätzen und Zielen der Raumordnung und Landesplanung für die Erholung oder den Fremdenverkehr vorgesehen sind.

Europareservate

Das Prädikat "Europareservat" verlei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e Deutsche Sektion des Internationalen Rates für Vogelschutz (DS-IRV). Nach Anerkennung der Schutzwürdigkeit des betreffenden Gebietes durch den Internationalen Rat für Vogelschutz macht sie die Verleihung in ihren Berichten bekannt. Es müssen fünf Kriterien erfüllt sein:

1. Internationales Interesse,
2. Lebensraum einer beachtlichen Zahl von Wat- und Wasservögeln,
3. mindestens Teilverbot der Jagd und Ausschluß anderer Beunruhigungen,
4. Sicherung des Kernbereichs als Naturschutzgebiet,
5. Bewachung und wissenschaftliche Betreuung.

Biosphärenreservate

Biosphärenreservate sind großflächige und repräsentative Ausschnitte biogeographisch definierter Landschaftsräume auf dem Lande oder an der Küste unter Einschluß limnischer bzw. mariner Ökosysteme. Sie stehen überwiegend unter unbefristetem und ausreichendem gesetzlichen Schutz. Es handelt sich dabei um Modellgebiete, wo unter Einbeziehung der hier lebenden arbeitenden Menschen Methoden zu Schutz, Pflege und Entwicklung erarbeitet und angewandt werden. Biosphärenreservate werden von der UNESCO anhand weltweit einheitlicher Kriterien anerkannt und sind in einem globalen Netz gleicher Zweckbestimmung und gleicher Standards miteinander verbunden. Sie dienen dem stetigen Austausch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se. Abgestuft nach dem Einfluß menschlicher Tätigkeit gliedern sie sich in eine oder mehrere streng geschützte Schutzzonen (Kernzonen) eine oder mehrere Pflegezonen (Pufferzonen) und eine Entwicklungszone (Übergangszone), die gegebenenfalls eine Regenerierungszone beinhalten kann.

Nummer 199b

Nationalpark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31.12.1992

Nr.	Nationalpark	Gründungs- jahr	Gesamt- fläche (ha)
I	<i>Niedersächsisches Wattenmeer</i> Niedersachsen	1986	240.000
II	<i>Hamburgisches Wattenmeer</i> Hamburg	1990	11.700
III	<i>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i> Schleswig-Holstein	1985	285.000
IV	<i>Vorpommersche Boddenlandschaft</i> Mecklenburg-Vorpommern	1990	80.500
V	<i>Jasmund</i> Mecklenburg-Vorpommern	1990	3.000
VI	<i>Müritz-Nationalpark</i> Mecklenburg-Vorpommern	1990	31.800
VII	<i>Hochharz</i> Sachsen-Anhalt	1990	5.868
VIII	<i>Sächsische Schweiz</i> Sachsen	1990	9.292
IX	<i>Bayerischer Wald</i> Bayern	1970	13.042
X	<i>Berchtesgaden</i> Bayern	1978	21.000

Gesamtfläche mit Wattenmeer: 699.902 ha (2,0 % des Bundesgebietes)

Gesamtfläche ohne Wattenmeer: 162.202 ha (0,5 % des Bundesgebietes)

Quelle: BFANL

Nummer 199c

Biosphärenreserva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31.12.1992

Biosphärenreservat	Kernzone (ha)	Pufferzone (ha)	Übergangs- zone (ha)	Gesamt- fläche (ha)
<i>Südost-Rügen</i> seit 7.3.1991 Mecklenburg-Vorpommern	360 (1,5 %)	3.750 (16,0 %)	19.390 (82,5 %)	23.500
<i>Schorfheide-Chorin</i> seit 16.11.1990 Brandenburg	3.522 (2,8 %)	26.544 (21,1 %)	95.825 (76,1 %)	125.891
<i>Mittlere Elbe</i> 24.11.1979, 29.1.1988 erweitert Sachsen-Anhalt	624 (1,5 %)	6.170 (14,3 %)	36.205 (84,2 %)	43.000
<i>Spreewald</i> seit 7.3.1991 Brandenburg	920 (1,9 %)	9.800 (20,6 %)	36.880 (77,5 %)	47.600
<i>Rhön*</i> seit 7.3.1991	12.350 (9,3 %)	33.650 (25,4 %)	86.600 (65,3 %)	132.600
<i>Vessertal-Thüringer Wald</i> 24.11.1979 Thüringen	276 (1,8 %)	2.189 (13,9 %)	13.285 (84,3 %)	15.750
<i>Bayerischer Wald</i> seit 1983 Bayern	8.030 (58,4 %)	5.720 (41,6 %)	-	13.300
<i>Alpen- u. Nationalpark Berchtesgaden</i> seit 16.11.1990 Bayern	17.500 (37,4 %)	3.400 (7,3 %)	25.900 (55,3 %)	46.800
<i>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i> seit 16.11.1990 Schleswig-Holstein	85.500 (30,0 %)	6.400 (2,2 %)	193.100 (67,8 %)	285.000
<i>Niedersächsisches Wattenmeer</i> seit November 1992 Niedersachsen	128.000 (53,3 %)	110.000 (45,9 %)	2.000 (0,8 %)	240.000
<i>Hamburgisches Wattenmeer</i> seit November 1992 Hamburg	10.500 (89,7 %)	1.200 (10,3 %)	-	11.700
<i>Pfälzerwald</i> seit November 1992 Rheinland-Pfalz	1.400 (0,8 %)	40.000 (22,2 %)	138.400 (77,0 %)	179.800

Gesamtfläche mit Wattenmeer: 1.165.390 ha (3,3 % des Bundesgebietes)

Gesamtfläche ohne Wattenmeer: 628.690 ha (1,8 % des Bundesgebietes)

* Landesanteile in Bayern (31.500 ha), Hessen (ca. 50.638 ha) und Thüringen (ca. 43.300 ha)

Quelle: MAB-Geschäftsstelle, BFANL

Nummer 199d

Landschaftsschutzgebiet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and 31.12.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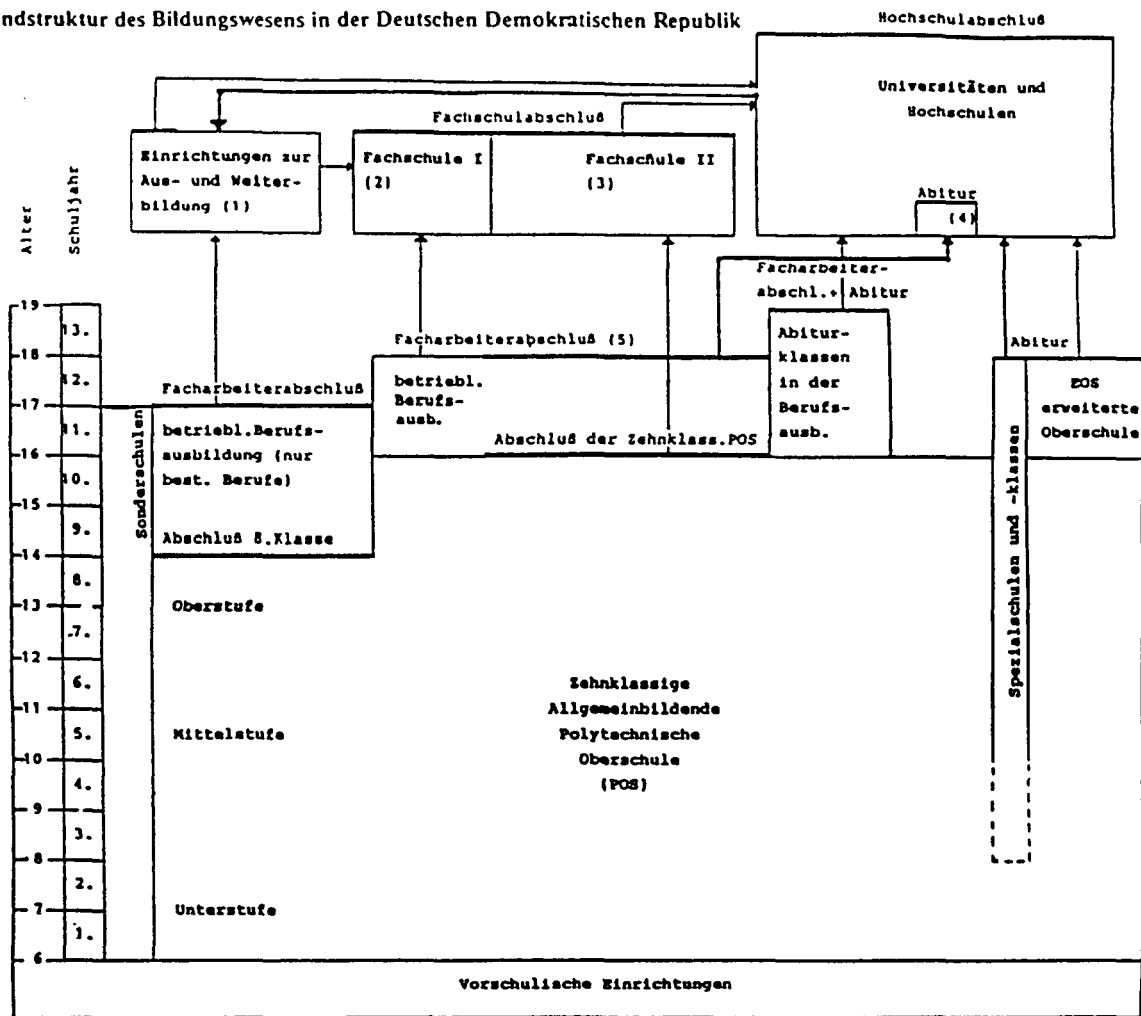
Land	Anzahl festgesetzter LSG	Fläche (ha)	Fläche %	Anzahl einstweilig sichergestellter LSG	Fläche (ha)	Fläche %
Berlin	40	2.362	2,7			
Baden-Württemberg	1.443	714.055	20,0			
Bayern ^a	753	1.717.400	24,3			
Brandenburg	87	456.300	15,7	14	268.000	9,2
Bremen	2	9.217	22,8			
Hamburg	70	17.236	23,0			
Hessen ^a	ca. 320	ca. 997.000	ca. 47,2			
Mecklenburg-Vorpommern ^a	ca. 80	ca. 407.920	ca. 17,1			
Niedersachsen	1.440	974.680	20,6			
Nordrhein-Westfalen ^a	ca. 1.200	ca. 1.500.000	ca. 44,0			
Rheinland-Pfalz	84	474.923	23,9			
Saarland ^a	ca. 200	ca. 102.685	ca. 21,5			
Sachsen	121	431.180	23,5	37	211.450	11,5
Sachsen-Anhalt	44	521.101	25,5	13	38.208	1,9
Schleswig-Holstein	258	340.626	21,7			
Thüringen	64	373.116	23,0	12	188.940	11,6
Bundesrepublik Deutschland	ca. 6.206	ca. 9.039.801	ca. 25,3	76	438.866	1,2

^a älterer Datenbestand, z.T. geschätzt
^b incl. Schutzzone der Naturparke

Quelle: BFANL; nach Angaben der Länder

Nummer 200

Grundstruktur des Bildungswesens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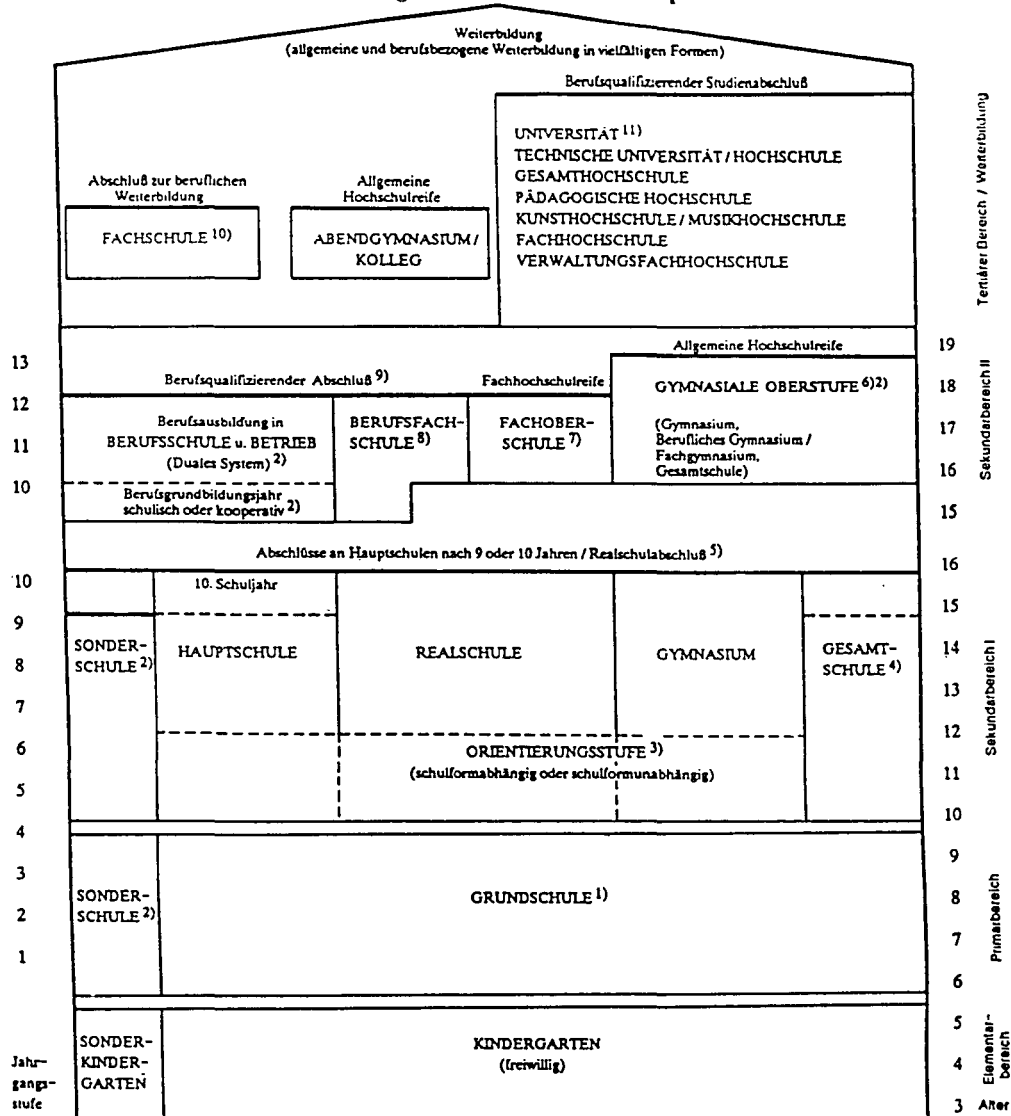


- (1) Betriebsakademien und Volkshochschulen.
- (2) Fachschule I (technischer und ökonomischer Bereich: bisher im Anschluß an abgeschlossene Berufsausbildung)
- (3) Fachschule II (paramedizinischer und sozialer Bereich und neue Techniker-/Wirtschaftlerausbildung) direkt im Anschluß an die POS
- (4) Vorkurs zur Erlangung der fachrichtungsgebundenen Hochschulreife
- (5) Schließt auch „Angestelltenqualifikationen“ des tertiären Bereiches ein

Quelle: Wolfgang Hörner:
 Bildung und Wissenschaft in der DDR
 Ausgangslage und Reform bis Mitte 1990
 Hrsg. BMBW, Bonn 1990

Nummer 201

Grundstruktur des Bildungswesen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chematisierte Darstellung des gegliederten Schulwesens nach dem Stand der Vereinbarungen unter den Ländern. Im Unterschied zu der dargestellten Grundstruktur umfaßt das Angebot an Schulen – außer den Sonderschulen – im Sekundarbereich I:

- Gesamtschule, Gymnasium und Realschule in Brandenburg
- Gymnasium sowie eine der folgenden Schulformen mit Hauptschulbildungsgang und Realschulbildungsgang: Mittelschule in Sachsen, Sekundarschule in Sachsen-Anhalt und Regelschule in Thüringen
-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 Gesamtschule sowie Sekundarschule als zusätzliches Angebot zu den Regelschulformen im Saarland.

Die Durchlässigkeit zwischen den Schulformen und die Anerkennung der Schulabschlüsse ist bei Erfüllung der zwischen den Ländern vereinbarten Voraussetzungen grundsätzlich gewährleistet. Die Dauer der Vollzeitschulpflicht (allgemeine Schulpflicht) beträgt 9 Jahre, in 4 Ländern 10 Jahre, und die anschließende Teilzeitschulpflicht (Berufsschulpflicht) 3 Jahre.

Anmerkungen zu Nummer 201

- 1 In einigen Ländern bestehen besondere Formen des Übergangs vom Kindergarten in die Grundschule (Vorklassen, Schulkindergärten). In Berlin und Brandenburg umfaßt die Grundschule 6 Jahrgangsstufen.
- 2 Beschulung von Behinderten entsprechend den Behinderungsarten in Sonderformen der allgemeinbildenden und beruflichen Schulen, teilweise auch integrativ zusammen mit Nichtbehinderten. Schulbezeichnung nach Landesrecht unterschiedlich.
- 3 Orientierungsstufe bzw. Förderstufe in allen Ländern, mit Ausnahme von Bayern (Erprobung als Schulversuch) und Berlin sowie Brandenburg (Jgst. 5 und 6 in der Grundschule) und Thüringen.
- 4 Als integrierte Gesamtschule eigene Schulform neben Hauptschule, Realschule und Gymnasium. Die Einrichtung von Gesamtschulen ist nach dem Schulrecht der Länder unterschiedlich geregelt.
- 5 Nachträglicher Erwerb dieser Abschlüsse an Abendschulen möglich.
- 6 Zugangsvoraussetzung ist die formelle Berechtigung zum Eintritt in die Gymnasiale Oberstufe. Der Erwerb der allgemeinen Hochschulreife erfolgt in der Regel nach 13 aufsteigenden Schuljahren. Soweit die allgemeine Hochschulreife in einzelnen neuen Ländern grundsätzlich von allen Schülern nach 12 Jahren erworben werden kann, ist die Geltung der Zeugnisse in allen Ländern für eine Übergangszeit gewährleistet.
- 7 Die Fachoberschule ist eine 2jährige Schulform, die aufbauend auf dem Realschulabschluß mit Jgst. 11 und 12 zur Fachhochschulreife führt. Absolventen der Berufsaufbauschule, die während oder im Anschluß an eine berufliche Erstausbildung die Fachschulreife erworben haben, können unmittelbar in Jgst. 12 eintreten. Für Absolventen mit Realschulabschluß und einer beruflichen Erstausbildung ist der unmittelbare Eintritt in Jgst. 12 der Fachoberschule möglich. Die Fachhochschulreife kann z.B. auch an Berufsfachschulen und Fachschulen erworben werden.
- 8 Berufliche Vollzeitschulen verschiedener Ausprägung im Hinblick auf Zugangsvoraussetzungen, Dauer und Abschlüsse. Besondere Form der 2jährigen Berufsfachschule mit Zugangsvoraussetzung Realschulabschluß, die zum Abschluß "staatlich geprüfter Assistent" führt, sowie einjährige Berufsfachschule zur Vermittlung einer beruflichen Grundbildung.
- 9 Zusätzlich zum berufsqualifizierenden Abschluß ggf. Erwerb eines Abschlusses, der dem Realschulabschluß gleichgestellt ist.
- 10 Fachschulen sind Schulen des Sekundarbereichs II, Dauer 1-3 Jahre.
- 11 Einschließlich Hochschulen mit einzelnen universitären Studiengängen (z.B. Theologie, Philosophie, Medizin, Verwaltungswissenschaften, Sport)

Stand: Juni 1992

Quelle: Sekretariat der Kultusministerkonferenz

Nummer 202a



Im Original farbig

Nummer 202b



Im Original farbig

Nummer 202c



Im Original farbig

Nummer 202d



Im Original farbig

Nummer 202e



Im Original farbig

Nummer 203**Finanzhilfen des Bundes im Rahmen der Sonderprogramme Übergangsfinanzierung Kultur**

Für die Übergangsfinanzierung Kultur sind 1991 bis 1993 im Haushalt des BMI folgende Bundesmittel bereitgestellt worden (Mio. DM):

Programm	1991	1992	1993	gesamt
Substanzerhaltung	600	491	378	1 469
Infrastrukturverbesserung	300	246	184	730
Denkmalschutz	50	93	43	186
gesamt	950	830	605	2 385

Mit den Bundesmitteln wurden 1991 bis 1993 an Einrichtungen bzw. an Projekten gefördert:

Programm	1991	1992	1993
Substanzerhaltung	310	180	ca. 120
Infrastrukturverbesserung	3 200	2 200	ca. 1 500
Denkmalschutz	440	500	ca. 400
Maßnahmen gesamt	ca. 4 000	ca. 2 900	ca. 2 000

Nummer 204**Herausgeber der 39 Tageszeitungen*) in der ehemaligen DDR:**

- SED, Anzahl der Tageszeitungen 17 (Gesamtauflage ca. 6,68 Mio.), davon regionale 16 (Gesamtauflage ca. 5,58 Mio.), überregionale 1 (Gesamtauflage ca. 1,1 Mio.);
- Blockparteien
 - CDU, Anzahl der Zeitungen 6 (Gesamtauflage ca. 270 000), davon regionale 5 (Gesamtauflage ca. 160 000), überregionale 1 (Gesamtauflage ca. 110 000);
 - LDPD, Anzahl der Zeitungen 5 (Gesamtauflage ca. 270 000), davon regionale 4 (Gesamtauflage ca. 210 000), überregionale 1 (Gesamtauflage ca. 60 000);
 - NDPD, Anzahl der Zeitungen 6 (Gesamtauflage ca. 200 000), davon regionale 5 (Gesamtauflage ca. 140 000), überregionale 1 (Gesamtauflage ca. 60 000);
 - DBP, eine überregionale Zeitung (Gesamtauflage ca. 90 000);
- Massenorganisationen
 - FDGB, eine überregionale Zeitung (Gesamtauflage ca. 410 000);
 - FDJ, eine überregionale Zeitung (Gesamtauflage ca. 1,5 Mio.);
 - DTSB, eine überregionale Zeitung (Gesamtauflage ca. 180 000);
- Domowina (Organisation der sorbischen Minderheit), eine regionale Zeitung (Gesamtauflage ca. 2 400).

*) Gutachten: Schneider u. a., „Strukturen, Anpassungsprobleme und Entwicklungschancen der Presse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einschließlich des Gebiets des früheren Berlin-Ost)“, Hannover und Leipzig, im Oktober 1991 und Februar 1992

Nummer 205**Die 15 ehemaligen SED-Bezirkszeitungen**

Erscheinungsort Titel 1989	Zahl der Aus- gaben 1989	politische Richtung 1989	Auflage 1989 in Tsd.	Titel 1992	Zahl der Aus- gaben I/1993	Auf- lage I/1993 in Tsd.	Kooperations- partner (K) 1990 bzw. Eigen- tümer (E) 1992
Berlin-Ost Berlin „Berliner Zeitung“	1	(SED- nahe)	439,1	„Berliner Zeitung“	2	263,8	(Maxwell)/ Gruner+Jahr (K/E)
Brandenburg Cottbus „Lausitzer Rundschau“	15	(SED)	293,0	„Lausitzer Rundschau“	14	214,6	„Saarbrücker Zeitung“ (K/E)
Frankfurt/Oder „Neuer Tag“	11	(SED)	212,2	„Märkische Oder-Zeitung“ (seit 17. 3. 1990)	11	168,0	Heinrich Bauer Ver- lag (K) „Südwest Presse“, Ulm (E); jetzt „Südwest Presse“ Ulm (50 %)/ Zeitungsgruppe Stuttgart (50 %) (E)
Potsdam „Märkische Volksstimme“	14	(SED)	350,8	„Märkische Allgemeine“ (seit 3. 10. 1990)	15	242,7	„Nordwest Zeitung“, Oldenburg (K) „Frankfurter Allgemeine“ (E)
Mecklenburg- Vorpommern Neubrandenburg „Freie Erde“	14	(SED)	204,0	„Nordkurier“ (seit 2. 4. 1990) [„Uckermark Kurier“] (Neugründung 1. 12. 1990; seit 1. 10. 1991 wieder in den „Nord- kurier“ einbezo- gen)	13	153,5	Heinrich Bauer Ver- lag (K) „Augsburger Allgemeine“/„Kieler Nachrichten“/ „Schwäbische Zeitung“, Leutkirch (je 33,3 %) (E)
Rostock „Ostsee-Zeitung“	11	(SED)	295,2	„Ostsee-Zeitung“	10	224,4	„Lübecker Nachrich- ten“ (K/E) derzeit „Lübecker Nachrich- ten“ (50 %)/Axel Springer Verlag AG (50 %) (E)
Schwerin „Schweriner Volkszeitung“	11	(SED)	202,9	„SVZ — Schweri- ner Volkszeitung“	11	158,7	Heinrich Bauer Verlag (K) Burda-Verlag (E)

Erscheinungsort Titel 1989	Zahl der Aus- gaben 1989	politische Richtung 1989	Auflage 1989 in Tsd.	Titel 1992	Zahl der Aus- gaben I/1993	Auf- lage I/1993 in Tsd.	Kooperations- partner (K) 1990 bzw. Eigen- tümer (E) 1992
Freistaat Sachsen							
Chemnitz „Freie Presse“	23	(SED)	663,7	„Freie Presse“	20	510,6	„Die Rheinpfalz“, Ludwigshafen (K/E)
Dresden „Sächsische Zeitung“	20	(SED)	568,9	„Sächsische Zeitung“	18	455,9	Gruner+Jahr (K) Gruner+Jahr (60 %)/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40 %) (E)
Leipzig „Leipziger Volkszeitung“	13	(SED)	483,9	„Leipziger Volkszeitung“	13	382,1	Verlagsgruppe Mad- sack, Hannover (K), Verlagsgruppe Madsack, Hannover (50 %), Axel Springer Verlag AG (50 %) (E)
Sachsen-Anhalt							
Halle „Freiheit“	23	(SED)	589,9	„Mitteldeutsche Zeitung“ (seit 17. 3. 1990)	16	451,2	M. DuMont Schau- berg, Köln („Kölner Stadt-Anzeiger“) (K/E)
Magdeburg „Volksstimme“	18	(SED)	453,6	„Volksstimme“	18	338,8	Heinrich Bauer Verlag (K/E)
Thüringen							
Erfurt „Das Volk“	15	(SED)	404,1	„Thüringer Allgemeine“ (seit 16. 1. 1990)	15	300,5	WAZ-Gruppe, Essen (K/E)
Gera „Volkswacht“	13	(SED)	239,0	[„Ostthüringer Nachrichten“] (seit 18. 1. 1990) „Ostthüringer Zei- tung“ (Neugrün- dung 2. 7. 1991)	15	178,1	WAZ-Gruppe, Essen (K) WAZ-Gruppe, Essen (40 %)/„Allgemeine Zeitung“, Mainz (40 %), Mitarbeiter der OTZ (20 %) (E)
Suhl „Freies Wort“	8	(SED)	178,5	„Freies Wort“	9	127,7	„Neue Presse“, Coburg (K/E)

Auflagenangaben 1989 sind offiziellen Unterlagen des ehemaligen Presse- und Informationsdienstes der Regierung der DDR entnommen;
Auflagenangaben 1992 beziehen sich auf das 2. Quartal; Angaben in (): eigene Recherchen oder (nicht immer vergleichbare) Verlagsangaben.

Quellen: Jahrbuch des Bundesverbandes Deutscher Zeitungsverleger „Zeitungen 92“;
Zeitungsliste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Stand 20. August 1993

Nummer 206

**Übersicht über die in den Jahren 1991, 1992 und 1993
aus dem Sportetat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für den Leistungssport in den neuen Ländern aufgewandten Mittel**

Aus dem Sportetat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sind in den Jahren 1991 und 1992 erhebliche Mittel in die neuen Bundesländer geflossen. Im Jahr 1993 wird die Sport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fortgesetzt. Eine Aufschlüsselung der Mittel in bezug auf den Spitzensport im Osten und im Westen Deutschlands ist nicht in allen Fällen möglich; so z. B. nicht bei der kostenintensiven Verbandsförderung (39,85 Mio. DM in 1992; 39,40 Mio. DM in 1993) sowie

den Entsendungskosten zu den Olympischen Spielen und den Paralympics (8,7 Mio. DM in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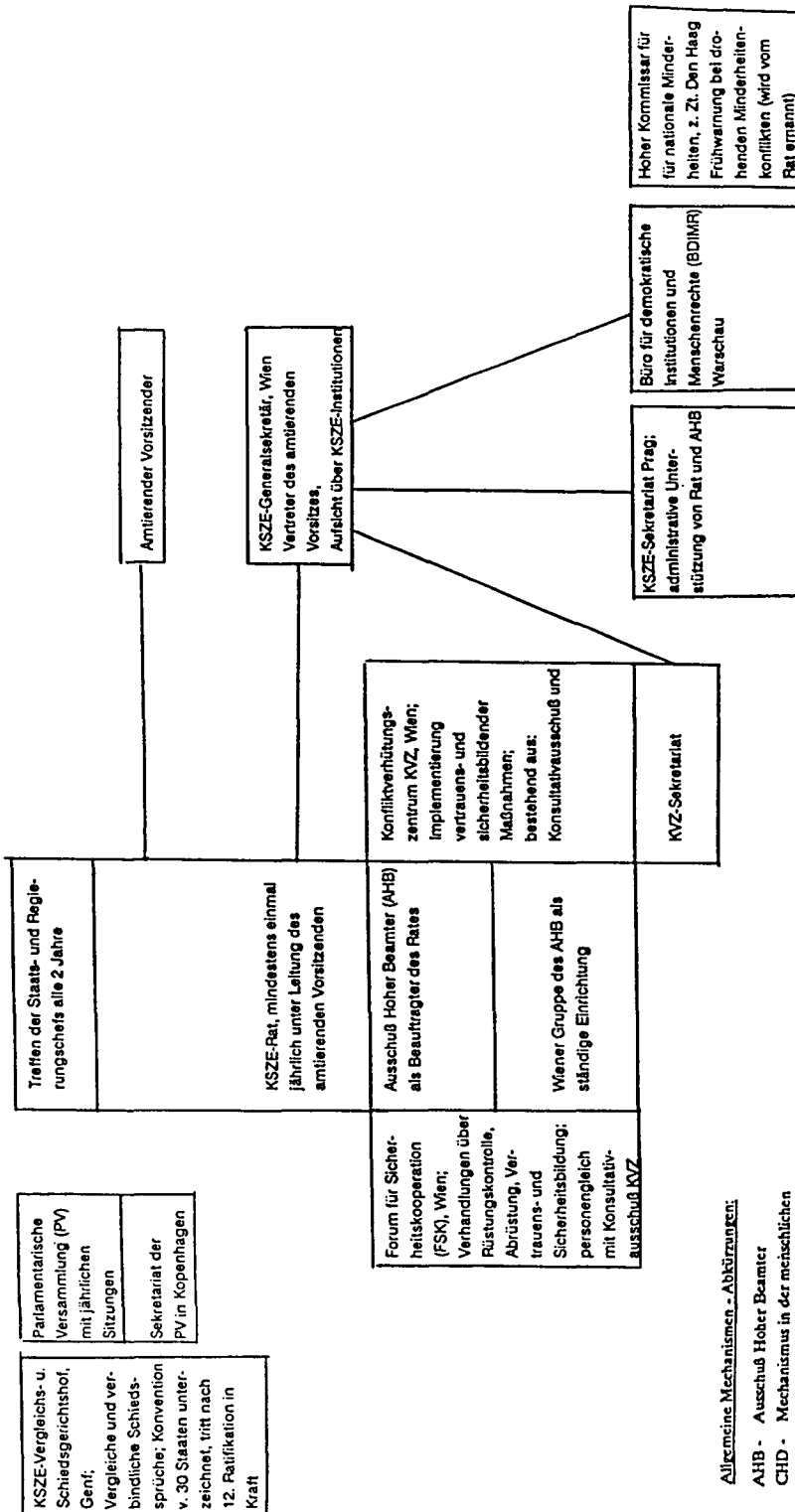
Von den Gesamtsätzen des Sportetats (ausgenommen Sportmuseum und Bewerbungskosten für Olympische Spiele 2000) in 1991 = 245,7 Mio. DM, in 1992 = 262,5 Mio. DM, in 1993 = 218,4 Mio. DM lassen sich nachstehende Aufschlüsselungen für Mittel, die in die neuen Länder geflossen sind, geben:

	Ist 1991	Ist 1992	Soll 1993
	— Mio. DM —		
Aufbau von 7 Olympiastützpunkten (einschließlich Berlin Ost)	9,5	9,8	10,0
Einrichtung von kombinierten Bundesleistungszentren/Leistungs- zentren	23,4	21,9	20,5
Sicherung der Weiterbeschäftigung von ca. 550 haupt- und neben- amtlichen Trainern (1993 = 330 Trainer)	13,0	15,2	15,6
Soziale Absicherung der Spitzensportler in den neuen Bundeslän- dern durch Zuschußgewährung an die Stiftung Deutsche Sport- hilfe	12,5	16,4	5,0 (gesperrt)
Strukturelle Hilfen an die Spitzenfachverbände zum Aufbau von Verbandsstrukturen im Beitrittsgebiet	8,0	5,5	—
Förderung des Breitensports der Behinderten gemäß Artikel 39 Abs. 3 Einigungsvertrag	1,2	1,2	—
Fortführung der in Artikel 39 Abs. 2 Satz 3 Einigungsvertrag genannten Einrichtungen (FES, IAT, Doping-Kontroll-Labor Krei- scha)	13,3	19,7	14,5
Zuschüsse an die Landessportbünde und an den DSB zur Unterstüt- zung der Vereine in den neuen Ländern	2,0	—	—
Sportstättenbauförderung	4,4	10,6	29,4
	87,3	100,3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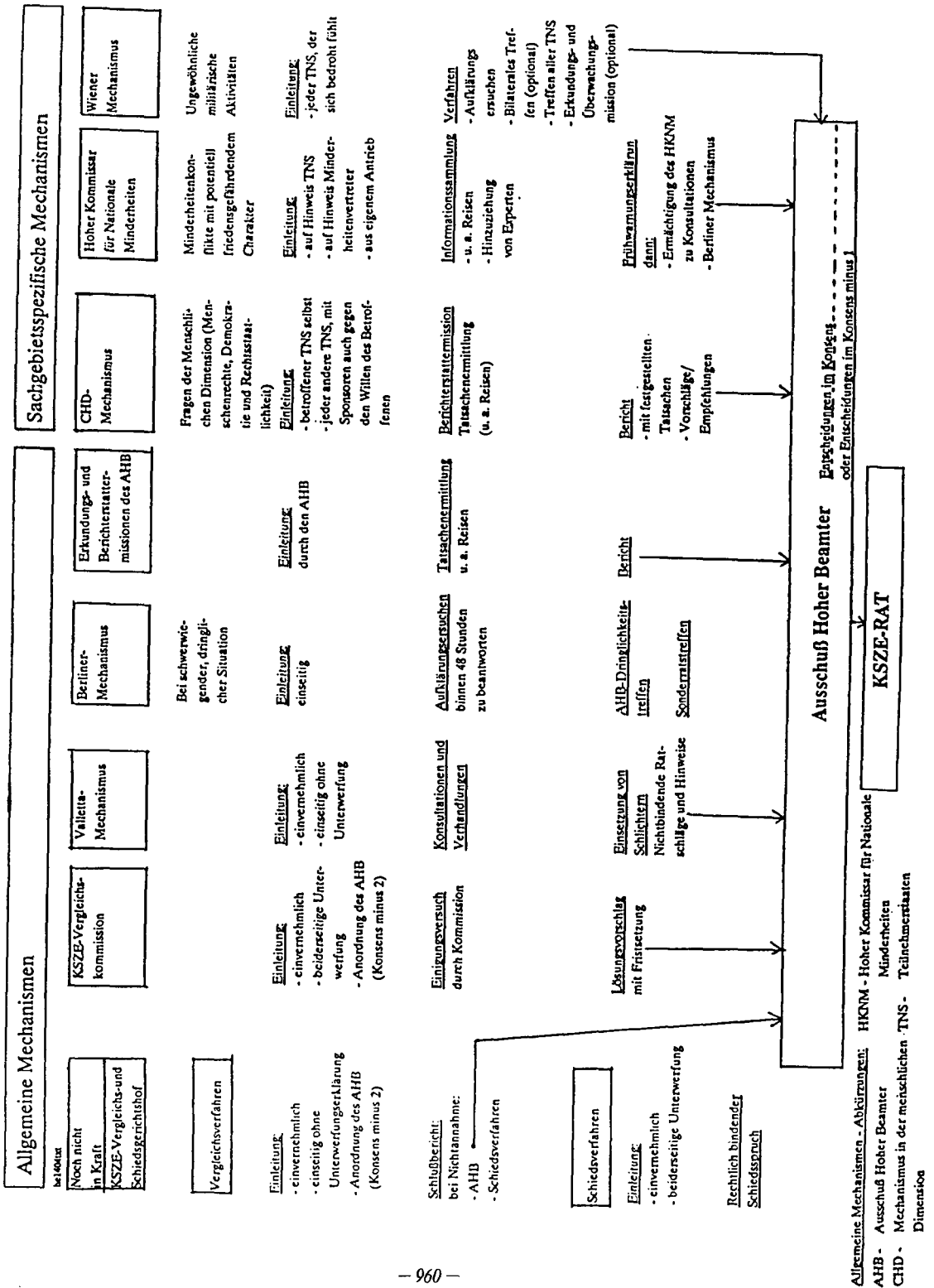
Nummer 207

W1705a

KSZE-Institutionen



Nummer 208



Nummer 209

**Europäisches Parlament Sitzverteilung
nach dem
Ratsbeschluß vom 1. Februar 1993**

	Bevölk. 1991 in Mio **	Status quo (bis 1994)				neues Modell ab 1994		
		Sitze	Einwohner pro Sitz (in Tsd.)	St-gewicht i.Vergl. zu D		Sitze	Einwohner pro Sitz (in Tsd.)	St-gewicht i.Vergl. zu D
Deutschland *	79,7	81	984	1	D	99	805	1
Italien	57,7	81	712	1,38 fach	I	87	663	1,21 fach
Großbritannien	57,5	81	710	1,39 fach	GB	87	661	1,22 fach
Frankreich	56,9	81	702	1,40 fach	F	87	654	1,23 fach
Spanien	39	60	650	1,51 fach	E	64	609	1,32 fach
Niederlande	15	25	600	1,64 fach	NL	31	484	1,66 fach
Griechenland	10,2	24	425	2,32 fach	Gr	25	408	1,97 fach
Belgien	10	24	417	2,36 fach	B	25	400	2,01 fach
Portugal	9,9	24	413	2,39 fach	P	25	396	2,03 fach
Dänemark	5,1	16	319	3,09 fach	DK	16	319	2,53 fach
Irland	3,5	15	233	4,22 fach	IRL	15	233	3,45 fach
Luxemburg	0,4	6	67	14,76 fach	LUX	6	67	12,08 fach
Durchschnitt:				Durchschnitt:				
Summe EG 12	344,9	518	519	3,12 fach		567	475	2,64 fach

* vor Wiedervereinigung 61,8 Mio. Einwohner, ca. 763 000 Einwohner pro Sitz

** Quelle: Eurostat 1992

Nummer 210a

Stand: 21. Juli 1993

Deutsche Unterstützungsmaßnahmen für den Reformprozeß in der ehemaligen UdSSR bzw. den Neuen Unabhängigen Staaten

Ausgaben sowie bestehende und geplante Verpflichtungen seit Ende 1989 in Mrd. DM

I. Zuschüsse und kostenlose Lieferungen von Waren	Humanitäre und technische Hilfen	Mrd. DM
Truppenabzug, Wiedereingliederungshilfen		
		Mrd. DM
1. „Überleitungseinkommen“ vom 9. Oktober 1990 zum Abzug der Westgruppe der Truppen (WGT) aus dem Beitrittsgebiet im einzelnen	4. Soforthilfe aus der Berlin- und Bundeswehrbevorratung (kostenlose Abgabe von Lebensmitteln, Hygieneartikeln, Krankenhausbedarf, Dezember 1990 bis Frühjahr 1991)	13,4
— 7,8 Mrd. DM (1991 bis 1994) Wohnungsbauprogramm für heimkehrende Militärangehörige (Auszahlung nach Baufortschritt)	5. Zuschuß zum Kauf von 142 000 t Lebensmitteln 1990	0,7
— 3 Mrd. DM (1991 bis 1994) deutscher Beitrag zum Überleitungsfonds für den Aufenthalt und den Abzug der WGT	6. Zuschuß zu Lebensmittellieferungen aus dem Beitrittsgebiet 1990	0,22
— 1 Mrd. DM (1991 bis 1994) Transportkosten zum Abzug der WGT	7. Medikamentenhilfe 1991, 1992	1,3
— 200 Mio. DM (1991 bis 1994) Umschulungsmaßnahmen für zurückkehrende Militärangehörige	8. Spenden aus der Bevölkerung 1990 bis 1992	0,31
— 1,4 Mrd. DM Zinskosten für bundesverbürgten, zinslosen 3 Mrd.-DM-Kredit mit einer Laufzeit von 5 Jahren zur Finanzierung des sowjetischen Anteils an den Aufenthalts- und Abzugskosten (s. II.1.b.)	9. Haushaltsmittel für Beratung, Aus- und Weiterbildung und sonstige technische Hilfe	0,65
2. Unterhaltskosten für den Aufenthalt der sowjetischen Streitkräfte in 1990	10. Deutscher Anteil (ca. 28%) an den EG-Hilfen (Zuschußteil) (ECU = 2,05 DM)	0,74
3. Wiedereingliederungshilfe für die nach Rußland zurückkehrenden Truppen (Gemeinsame Erklärung BK Kohl/Präs. Jelzin vom 16. Dezember 1992)	Technische Hilfe (Beschluß Rom Dezember 1990) 400 Mio. ECU für 1991 450 Mio. ECU für 1992	0,55
	Nahrungsmittelhilfe 250 Mio. ECU (Beschluß Rom Dezember 1990) 200 Mio. ECU Moskau/St Petersburg (Beschluß Maastricht Dezember 1991)	
	Summe I.: 19,32	

Nummer 210b**Deutsche Hilfeleistungen (nur Bund) an die MOE-Staaten Albanien, Bosnien-Herzegowina, Bulgarien, Estland, Kroatien, Makedonien, Lettland, Litauen, Polen, Rumänien, Serbien/Montenegro, Slowenien, Tschechische Republik/Slowakische Republik und Ungarn 1990 bis 1993 — Mio. DM —**

Verwendungszweck	Ressort	1990	1991	1992	1993 (Soll)
Pol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70,5	515,7	360,4	1 303,9
Kapitalanlagegarantien	BMWi	0,6	35,8	110,8	329,6
Kreditlinie der KfW (422 Mio. DM)					
Stabilisierungsfonds	BMF				
Erlaß Jumbo-Kredit		760,0			
„Zlotysierung“ künftiger Zahlungen	BMF	62,5	61,3	60,0	58,7
Zinsverbilligung Jumbo-Kredit	BMF	27,5	24,8	22,0	21,7
Schuldenerlaß Pariser Club				4 500,0	
Förderung der Wasserstiftung und Landmaschinen, Beratung/Fortbildung	AA/BML	15,5	10,2	2,5	1,3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2,0	2,7	2,2	
Humanitäre Hilfe (89/90 Ref. 301)	AA	20,0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2,2	2,1	2,2	2,2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2	0,8	1,5	
Bau-Beratungshilfen	BMBau			0,2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BMBW	0,2	2,3	4,9	1,5
Gemeinschaftsfördernde, soziale und Gesundheits- hilfen, Aus- und Fortbildung	BMI	6,8	28,6	23,2	28,7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BMJ				0,3
Fahrzeuge, Sanitätsmaterial	BMVg		0,1	1,7	
Consultingleistungen	BMWi	0,8	1,9	0,7	1,2
Umweltberatungshilfen	BMU			1,0	1,8
TZ-Projekte: Förder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BMZ	3,5	7,4	12,0	12,4
Planung Busreservierungssystem	BMPT			0,2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7	0,6
Gesundheitsaufgaben	BMG		0,2	0,1	0,1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BMFJ			0,5	
Transferrubelsaldo (2 048 Mio.)	BMF				
Summen Polen		972,3	693,9	5 106,8	1 764,0
(Polen 1990 bis 1993: 8 537,0 Mio. DM)					
Ungarn					
Hermes Exportbürgschaften	BMWi	444,0	316,6	271,5	146,3
ungebundene Finanzkredite		500,0			
Kapitalanlagegarantien	BMWi	192,7	656,9	69,5	86,7
Existenzgründungsfonds	BMF		40,0	60,0	
Förderung Post/Telekom (GSM)	BMPT		1,4	16,0	0,5
Fahrzeuge, Flugzeuge, Triebwerke	BMVg			0,3	75,0
Energiehilfe/Kohlelieferungen (420)	AA		50,0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1,6	1,9	1,6	2,0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0,6	1,0	

Verwendungszweck	Ressort	1990	1991	1992	1993 (Soll)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2,8	2,4	2,4	2,1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5	0,9	1,5	
Bau-Beratungshilfe/Seminar	BMBau			0,1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BMBW		0,8	4,4	2,9
Gemeinschaftsfördernde, soziale und Gesundheits- hilfen, Aus- und Fortbildung	BMI		0,5	1,5	8,1
Umweltsanierungen, EBWE-Fonds	BMU	0,8	0,9	0,5	3,1
Consultingleistungen	BMWi	0,5	1,3	0,6	1,0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BMJ				0,3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4	1,2
TZ-Projekte: Förder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BMZ	6,3	8,1	7,8	9,0
Gesundheitsaufgaben	BMG		0,2	0,2	0,1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BMFJ		0,2	0,2	
Transferrubelsaldo (1 326 Mio. DM)	BMF				
Summen Ungarn		1 149,2	1 082,7	439,5	338,3
(Ungarn 1990 bis 1993: 3 009,7 Mio. DM)					
Tschechische Republik/Slowakische Republik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460,9	558,7	950,5	1 444,6
Kapitalanlagegarantien	BMWi		1 028,3	189,5	1 044,4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2,0	1,0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1,3	2,1	2,3	2,1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0,4	0,5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2	0,8	1,6	
Umwelthilfen, Reaktorsicherheit, EBWE	BMU			25,6	10,2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BMBW		0,1	0,5	1,7
Bau-Beratungshilfen	BMBau			0,4	
Gemeinschaftsfördernde, soziale und Gesundheits- hilfen, Aus- und Fortbildung	BMI		2,7	1,5	3,9
Fahrzeuge, Sanitätsmaterial	BMVg			0,1	0,2
Consultingleistungen	BMWi	0,5	1,9	1,0	1,2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BMJ				0,6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5	0,6
TZ-Projekte: Förder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BMZ		2,6	4,4	5,1
Gesundheitsaufgaben	BMG		0,1	0,1	0,1
Aus- und Weiterbildung/Paketzentrum	BMPT			0,6	0,3
Transferrubelsaldo (1 598 Mio. DM)	BMF				
Summen Tschechische Republik/Slowakische Republik		462,9	1 597,7	1 181,1	2 516,0
(Tschechische Republik/Slowakische Republik 1990 bis 1993: 5 757,7 Mio. DM)					
Sloweni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68,4	199,4
Kapitalanlagegarantien	BMWi			69,0	41,0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0,1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5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BMI				1,5
Consultingleistungen	BMWi			0,6	0,3

Verwendungszweck	Ressort	1990	1991	1992	1993 (Soll)
Mobilfunk GSM	BMPT				0,1
EZ-Projekte	BMZ				12,3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1
Humanitäre Hilfe (301)	AA			0,4	0,6
Hilfsgüter (Sanitätsmaterial etc.)	BMVg			0,2	0,4
Summen Slowenien				139,2	255,7
(Slowenien 1992 bis 1993: 394,9 Mio. DM)					
Kroati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198,6	126,3
Kapitalanlagegarantien	BMWi				64,5
Hilfsgüter (Sanitätsmaterial etc.)	BMVg			3,0	4,0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0,1	
Seekabel für internationale Vermittlung	BMPT				0,5
TZ- und EZ-Projekte	BMZ				11,5
Humanitäre Hilfe, Notbauten (301)	AA			63,8	
Summen Kroatien				265,5	206,8
(Kroatien 1992 bis 1993: 472,3 Mio. DM)					
Bosnien-Herzegowina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212,0	
Humanitäre Hilfe (301)	AA			6,9	
Kosten der Luftbrücke	BMVg			9,6	
Hilfsgüter (Sanitätsmaterial etc.)	BMVg			2,5	4,0
Summen Bosnien-Herzegowina				231,0	4,0
(Bosnien-Herzegowina 1992 bis 1993: 235,0 Mio. DM)					
„Jugoslawien“/Nachfolgestaat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562,5	343,4	35,8	
Kapitalanlagegarantien	BMWi	19,4	75,7		
Humanitäre Hilfe (301)	AA		16,7		
Reintegrationsmaßnahmen	BMZ	2,9	5,4	10,1	
Sanitätsmaterial	BMVg		0,5	0,5	
Summen Jugoslawien		584,8	441,7	46,4	
(„Jugoslawien“/Nachfolgestaaten 1990 bis 1992: 1 072,9 Mio. DM)					
Bulgari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146,0	7,5	4,5	27,5
Kapitalanlagegarantien	BMWi				12,4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0,3		0,9	0,8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0,2		0,5	0,2
Humanitäre Hilfe (301)	AA	2,3	0,1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0,1	1,0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4	0,9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BMBW			0,2	0,7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3	0,1
Aus- und Fortbildung,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BMI			2,0	4,9
Umwelthilfe, Sanierungen, EBWE	BMU		0,9	1,5	2,4

Verwendungszweck	Ressort	1990	1991	1992	1993 (Soll)
Beratung Städtebau	BMBau			0,1	
Fahrzeuge, Sanitätsmaterial usw.	BMVg		4,4	0,2	0,2
Consultingleistungen	BMWi		0,5	1,1	1,8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BMJ				0,4
TZ-Projekte: Förder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BMZ		0,9	1,3	1,5
Gesundheitsaufgaben	BMG		0,1	0,1	0,1
Förderung internationales Postamt Sofia	BMPT			0,3	
Transferrubelsaldo (1 245 Mio. DM)	BMF				
Summen Bulgarien (Bulgarien 1990 bis 1993: 231,6 Mio. DM)		148,8	14,9	14,9	53,0
Rumäni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38,9	77,2	392,4	594,6
Kapitalanlagegarantien	BMWi		0,6	17,2	8,0
Energiehilfe/Stromlieferungen (405)	AA	50,0	50,0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1,0	0,4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0,2	0,6	0,8	
Humanitäre Hilfe (301)	AA	69,0		0,1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0,3	0,7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5	1,8	
Gemeinschaftsfördernde, soziale und Gesundheits- hilfen, Aus- und Fortbildung	BMI	45,4	21,5	16,6	25,7
Umweltberatungshilfen	BMU			0,1	
Fahrzeuge, Sanitätsmaterial usw.	BMVg	8,4	0,4	0,5	1,0
Consultingleistungen	BMWi	0,2	0,8	0,3	
TZ-Projekte: Förder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BMZ		0,8	2,8	6,4
Projekte/Aus- und Weiterbildung	BMPT			0,4	0,4
Gesundheitsaufgaben	BMG			0,1	0,1
Transferrubelsaldo (1 209 Mio. DM)	BMF				
Summen Rumänien (Rumänien 1990 bis 1993: 1 435,2 Mio. DM)		212,1	152,7	434,8	635,6
Litau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9,4	27,3
Kapitalanlagegarantien	BMWi				0,7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0,8	0,5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0,3	0,2
Verkehrsberatung und Ausbildung	BMV			0,3	0,7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3,9	1,3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BMFJ				0,1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7
Polizeiliche Ausrüstungshilfen	BMI				1,0
Consultingleistungen	BMWi			0,4	0,8
Ausgesondertes NVA-Material (Flugzeuge)	BMVg			0,5	6,1
Planung Postamt/Beratung	BMPT			0,1	0,4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BMJ				0,3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300)	AA			3,0	
Beratung Stadt Wilna	BMBau			(92—94) 0,3	

Verwendungszweck	Ressort	1990	1991	1992	1993 (Soll)
Gesundheitsaufgaben	BMG				0,1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BMBW			1,8	0,8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1	
Beratung Umwelt, Kernkraftsicherheit, EBWE-Fonds, etc.	BMU			2,0	4,4
TZ-Projekte und Vorhaben	BMZ			0,5	2,1
Summen Litauen (Litauen 1992 bis 1993: 70,9 Mio. DM)				23,4	47,5
Lettland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35,5
Kapitalanlagegarantien	BMWi				9,4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0,7	0,5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0,5	0,4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2,3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BMJ				0,3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BMFJ				0,1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1,2
Polizeiliche Ausrüstungshilfen etc.	BMI			0,2	2,0
Consultingleistungen	BMWi			0,1	0,8
Ausgesondertes NVA-Material	BMVg			0,5	4,5
Aufbau Fernmeldenetz/Beratung	BMPT				1,1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300)	AA			3,0 (92—94)	
Humanitäre Hilfe (301)	AA			0,1	
Gesundheitsaufgaben	BMG				0,1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BMBW			1,9	1,1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3	0,3
Beratung Städtebau	BMBau			0,2	
Beratung Umwelt	BMU				0,1
TZ-Projekte und Vorhaben	BMZ			3,5	0,4
Summen Lettland (Lettland 1992 bis 1993: 71,1 Mio. DM)				13,3	57,8
Estland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127,7
Kapitalanlagegarantien	BMWi				0,5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604)	AA			0,5	0,5
Aktivitäten der politischen Stiftungen	AA			0,2	0,2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2,7	
Jugendpolitische Zusammenarbeit	BMFJ				0,2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3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n	BMI			0,2	1,7
Consultingleistungen	BMWi			1,8	1,8
Ausgesondertes NVA-Material	BMVg			0,3	6,1
Aus- und Weiterbildung	BMPT				0,1
Beratung bei der Gesetzgebung	BMJ				0,5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300)	AA			3,0 (92—94)	
Gesundheitsaufgaben	BMG				0,1
Aus- und Weiterbildungsmaßnahmen	BMBW			1,9	1,3

Verwendungszweck	Ressort	1990	1991	1992	1993 (Soll)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1	
Beratung Umwelt	BMU				0,2
TZ-Projekte und Vorhaben	BMZ			2,3	
Summen Estland (Estland 1992 bis 1993: 154,2 Mio. DM)				13,0	141,2
Albani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2,1	15,5		
Kapitalanlagegarantien	BMWi				11,9
Humanitäre Hilfe (AA)	AA	0,9	1,0	0,9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3,1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2	0,6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BMI			0,5	
Fahrzeuge, Sanitätsmaterial usw.	BMVg		2,5	0,5	3,0
Umweltberatungshilfen	BMU			0,1	
TZ-Projekte	BMZ	2,2	6,0	1,4	9,4
FZ-Projekte	BMZ		20,0	17,0	34,3
Summen Albanien (Albanien 1990 bis 1993: 133,1 Mio. DM)		5,2	45,2	24,1	58,6
Nicht aufteilbare Beträge					
TZ/FZ-Projekte	BMZ			12,7	11,6
Beratungsprogramm Privatisierung	BMF		5,0	4,0	10,0
Beratungsprogramm Kapitalmärkte	BMF			0,5	1,4
Beratungsprogramm Finanzen/Steuern	BMF			0,5	4,5
Kapitalanteil der EBWE	BMF		105,0	105,0	105,0
Förderung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BMWi			3,0	8,0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9	1,5
Ausbildung/Unterbringung Dipl. IAF-DA	AA			0,7	0,7
Summen nicht aufteilbare Beträge (nicht aufteilbare Beträge 1990 bis 1993: 380,0 Mio. DM)			110,0	127,3	142,7

Gesamthilfen des Bundes 1990:	3 535,3 Mio. DM
Gesamthilfen des Bundes 1991:	4 138,8 Mio. DM
Gesamthilfen des Bundes 1992:	8 060,3 Mio. DM
Soll des Bundes 1993:	6 221,2 Mio. DM
1990 bis 1993 zusammengefaßt:	<u>21 955,6 Mio. DM</u>

nachrichtlich: Gesamtsumme	
Transferrubelsalden	<u>7 426,0 Mio. DM</u>
Zinsausgaben dafür bisher:	<u>933,0 Mio. DM</u>

Erläuterungen:

Bei den Zahlen für 1992 handelt es sich um Istbeträge und für 1993 um Sollbeträge. Zahlen über Schuldenerlasse, Zinsvorteile und sonstige i. d. R. mittelfristige Kredite sowie Hermes-Bürgschaften und Kapitalanlagegarantien (bis 12/93) wurden mit einbezogen. Darüber hinaus wurde Ende 1989 Ungarn ein ungebundener Finanzkredit in Höhe von 500 Mio. DM gewährt; Polen wurde im Dezember 1989 im Rahmen eines multilateralen „Zloty-Stabilisierungs-Fonds“ von deutscher Seite ein Kreditrahmen in Höhe von 250 Mio. US\$ zugesagt (n i c h t in Liste). Über Transferrubelguthaben wird z. Zt. noch verhandelt. Diese Zahlen erscheinen daher lediglich in Klammern und nachrichtlich in einer Gesamtsumme am Ende der Aufstellung. Anteile der Bundesländer (erwähnt werden sollten die Garantie-Programme bzw. Bürgschaftsrahmen der Länder Niedersachsen über 250 Mio. DM, Bayern für Polen, CSFR, Ungarn über 100 Mio. DM, Baden-Württemberg über 250 Mio. DM für Ungarn und Nordrhein-Westfalen je 90 Mio. DM für Polen, CSFR und Ungarn) und deutsche Leistungen an die EG sind n i c h t enthalten. Auch die Leistungen für das Jahr 1989 sind in der Liste nicht enthalten.

Verwendungszweck	Ressort	1990	1991	1992	1993 (Soll)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1	
Beratung Umwelt	BMU				0,2
TZ-Projekte und Vorhaben	BMZ			2,3	
Summen Estland (Estland 1992 bis 1993: 154,2 Mio. DM)				13,0	141,2
Albanien					
Hermes-Exportbürgschaften	BMWi	2,1	15,5		
Kapitalanlagegarantien	BMWi				11,9
Humanitäre Hilfe (AA)	AA	0,9	1,0	0,9	
Beratungs- und Fortbildungsmaßnahmen	BML			3,1	
Sozialpolitische Beratungshilfe	BMA		0,2	0,6	
Polizeiliche Ausstattungshilfe	BMI			0,5	
Fahrzeuge, Sanitätsmaterial usw.	BMVg		2,5	0,5	3,0
Umweltberatungshilfen	BMU			0,1	
TZ-Projekte	BMZ	2,2	6,0	1,4	9,4
FZ-Projekte	BMZ		20,0	17,0	34,3
Summen Albanien (Albanien 1990 bis 1993: 133,1 Mio. DM)		5,2	45,2	24,1	58,6
Nicht aufteilbare Beträge					
TZ/FZ-Projekte	BMZ			12,7	11,6
Beratungsprogramm Privatisierung	BMF		5,0	4,0	10,0
Beratungsprogramm Kapitalmärkte	BMF			0,5	1,4
Beratungsprogramm Finanzen/Steuern	BMF			0,5	4,5
Kapitalanteil der EBWE	BMF		105,0	105,0	105,0
Förderung kleiner und mittlerer Unternehmen	BMWi			3,0	8,0
Forschungs- und Technologieförderung	BMFT			0,9	1,5
Ausbildung/Unterbringung Dipl. IAF-DA	AA			0,7	0,7
Summen nicht aufteilbare Beträge (nicht aufteilbare Beträge 1990 bis 1993: 380,0 Mio. DM)			110,0	127,3	142,7

Gesamthilfen des Bundes 1990:	3 535,3 Mio. DM
Gesamthilfen des Bundes 1991:	4 138,8 Mio. DM
Gesamthilfen des Bundes 1992:	8 060,3 Mio. DM
Soll des Bundes 1993:	6 221,2 Mio. DM
1990 bis 1993 zusammengefaßt:	<u>21 955,6 Mio. DM</u>

nachrichtlich: Gesamtsumme Transferrubelsalden	<u>7 426,0 Mio. DM</u>
Zinsausgaben dafür bisher:	<u>933,0 Mio. DM</u>

Erläuterungen:

Bei den Zahlen für 1992 handelt es sich um Istbeträge und für 1993 um Sollbeträge. Zahlen über Schuldenerlasse, Zinsvorteile und sonstige i. d. R. mittelfristige Kredite sowie Hermes-Bürgschaften und Kapitalanlagegarantien (bis 12/93) wurden mit einbezogen. Darüber hinaus wurde Ende 1989 Ungarn ein ungebundener Finanzkredit in Höhe von 500 Mio. DM gewährt; Polen wurde im Dezember 1989 im Rahmen eines multilateralen „Zloty-Stabilisierungs-Fonds“ von deutscher Seite ein Kreditrahmen in Höhe von 250 Mio. US\$ zugesagt (n i c h t in Liste). Über Transferrubelguthaben wird z. Zt. noch verhandelt. Diese Zahlen erscheinen daher lediglich in Klammern und nachrichtlich in einer Gesamtsumme am Ende der Aufstellung. Anteile der Bundesländer (erwähnt werden sollten die Garantie-Programme bzw. Bürgschaftsrahmen der Länder Niedersachsen über 250 Mio. DM, Bayern für Polen, CSFR, Ungarn über 100 Mio. DM, Baden-Württemberg über 250 Mio. DM für Ungarn und Nordrhein-Westfalen je 90 Mio. DM für Polen, CSFR und Ungarn) und deutsche Leistungen an die EG sind n i c h t enthalten. Auch die Leistungen für das Jahr 1989 sind in der Liste nicht enthalten.

Nummer 211

Das neue Asylrecht

Um dem Mißbrauch des Asylrechts entgegenzuwirken, aber auch, um eine volle Teilhab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 einer harmonisierten europäischen Ausländer- und Asylpolitik zu ermöglichen, haben Ende Mai 1993 der Deutsche Bundestag und der Bundesrat folgende Gesetze verabschiedet:

-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16 und 18),
- Gesetz zur Änderung asylverfahrens-, ausländer- und staatsangehörigkeitsrechtlicher Vorschriften,
- Gesetz zur Neuregelung der Leistungen an Asylbewerber.

Außerdem hat die Bundesregierung am 7. Mai 1993 das Abkommen über die Zusammenarbeit hinsichtlich der Auswirkungen von Wanderungsbewegungen mit der Republik Polen unterzeichnet.

I. Änderung von Artikel 16 Grundgesetz

Ziel dieser Neuregelung ist, politisch Verfolgten weiterhin Schutz und Zuflucht zu gewähren, aber eine unberechtigte Berufung auf das Asylrecht zu verhindern und diejenigen Ausländer von einem langwierigen Asylverfahren auszuschließen, die des Schutzes deshalb nicht mehr bedürfen, weil sie offensichtlich nicht oder nicht mehr aktuell politisch verfolgt sind. Außerdem soll das Asylverfahren einschließlich des gerichtlichen Verfahrens beschleunigt werden.

Im einzelnen:

Absatz 1 übernimmt unverändert den Wortlaut des bisherigen Artikels 16 Abs. 2 Satz 2: Die Verbürgung des Schutzes vor politischer Verfolgung behält den Charakter eines Individualgrundrechtes.

Absatz 2 schließt bei Einreise des Ausländers aus sicheren Drittstaaten eine Berufung auf das Asylrecht aus. Sichere Drittstaaten sind alle EG-Staaten und andere Staaten, in denen die Anwendung der Genfer Flüchtlingskonvention und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sichergestellt ist. Dies ermöglicht es, die Betroffenen an der Grenze zurückzuweisen oder unverzüglich in den sicheren Drittstaat zurückzubringen. Aufenthaltsbeendende Maßnahmen können unabhängig von einem hiergegen eingelegten Rechtsbehelf vollzogen werden.

Absatz 3 eröffnet dem Gesetzgeber die Möglichkeit, eine Liste von Herkunftsländern zu erstellen, für die die widerlegbare Vermutung der Verfolgungsfreiheit besteht. Dabei muß Freiheit vor politischer Verfolgung grundsätzlich landesweit bestehen.

Absatz 4 erleichtert die Vollziehung aufenthaltsbeendender Maßnahmen gegenüber der gegenwärtigen Rechtslage bei Einreise aus einem sicheren Her-

kunftsland und in anderen Fällen offensichtlicher Unbegründetheit des Asylantrags.

Absatz 5 ermöglicht eine Ratifikation des Schengener Übereinkommens und des Dubliner Asylrechtsübereinkommens mit allen Rechten und Pflichten. Entsprechende Verträge können mit anderen Staaten geschlossen werden, in denen die Anwendung der GFK und der EMRK sichergestellt ist.

II. Gesetz zur Änderung asylverfahrens-, ausländer- und staatsangehörigkeitsrechtlicher Vorschriften

Das Gesetz zur Änderung asylverfahrens-, ausländer- und staatsangehörigkeitsrechtlicher Vorschriften setzt die neuen verfassungsrechtlichen Vorgaben um. Es ist am 1. Juli 1993 in Kraft getreten.

Kernpunkte der Gesetzesänderung sind:

1. Prinzip des „sicheren Drittstaates“

Nach § 26 a Asylverfahrensgesetz (AsylVfG) kann sich ein Ausländer nicht auf das Asylgrundrecht berufen, sofern er über einen sicheren Drittstaat eingereist ist. Dies ermöglicht es, die Betroffenen an der Grenze zurückzuweisen oder unverzüglich in den sicheren Drittstaat zurückzubringen. Die aufenthaltsbeendenden Maßnahmen können unabhängig von einem hiergegen eingelegten Rechtsbehelf vollzogen werden. Unberührt bleibt die Möglichkeit, vom sicheren Drittstaat aus ein Klageverfahren zu betreiben.

Sichere Drittstaaten sind außer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nur Staaten, in denen die Anwendung der Genfer Flüchtlingskonvention und der Europäischen Menschenrechtskonvention sichergestellt ist (vgl. Artikel 16 a Abs. 2 Satz 1 GG).

Staaten, die nicht Mitgliedstaaten der EG sind und die o. g. Voraussetzungen erfüllen, werden vom Gesetzgeber festgelegt. Es wurden folgende Staaten in die Liste der „sicheren Drittstaaten“ aufgenommen: Finnland, Norwegen, Österreich, Polen, Schweden, Schweiz und die Tschechische Republik (vgl. Anlage I zu § 26 a AsylVfG).

Die Qualifizierung als sicherer Drittstaat folgt im wesentlichen den Bedingungen und Kriterien, auf die sich die für Einwanderungsfragen zuständigen Minister der EG in ihrer Entschließung zu „Aufnahmedritt-ländern“ am 30. November/1. Dezember 1992 geeinigt haben. Allerdings ist nach der deutschen Regelung des „sicheren Drittstaates“ ein Gebietskontakt erforderlich, wobei der bloße Transit genügt.

2. Prinzip des „sicheren Herkunftsstaates“

Nach § 29 a AsylVfG ist der Asylantrag eines Ausländers aus sicheren Herkunftsstaaten als offensichtlich unbegründet abzulehnen, es sei denn, die von ihm angegebenen Tatsachen oder Beweismittel begründen die Annahme, daß ihm — abweichend von der allgemeinen Lage im Herkunftsland — politische Verfolgung droht (widerlegliche Vermutung).

Die Anträge werden in einem verkürzten und beschleunigten Asylverfahren behandelt; es wird auf die Ausführungen unter Ziffer 3 zu „offensichtlich unbegründeten Asylanträgen“ verwiesen.

Die sicheren Herkunftsstaaten werden vom Gesetzgeber bestimmt. Es handelt sich um Länder, bei denen aufgrund der Rechtslage, der Rechtsanwendung und der allgemeinen politischen Verhältnisse gewährleistet erscheint, daß dort weder politische Verfolgung noch unmenschliche oder erniedrigende Bestrafung oder Behandlung stattfindet (vgl. Artikel 16 a Abs. 3 Satz 1 GG).

Der Prüfung dieser Voraussetzungen ist ein umfangreicher Kriterienkatalog zugrundegelegt worden:

- Höhe der Anerkennungsquote in den vergangenen Jahren,
- allgemeine politische Lage (z. B. demokratische Struktur des Staates),
- Achtung der Menschenrechte (z. B. Beachtung der VN-Konvention über die zivilen und bürgerlichen Rechte),
- Bereitschaft des Herkunftsstaates, unabhängigen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zur Überwachung der Menschenrechtslage Zutritt zu seinem Hoheitsgebiet zu gewähren,
- Stabilität des Landes.

Diese Kriterien orientieren sich an den Schlußfolgerungen der für Einwanderungsfragen zuständigen Minister der EG vom 30. November/1. Dezember 1992 betreffend Länder, in denen „im allgemeinen keine ernsthafte Verfolgungsgefahr“ besteht.

Als sichere Herkunftsstaaten wurden festgelegt: Bulgarien, Gambia, Ghana, Polen, Rumänien, Senegal, Slowakische Republik, Tschechische Republik und Ungarn (vgl. Anlage II zu § 29 a AsylVfG).

3. Offensichtlich unbegründete Asylanträge

In § 30 Abs. 3 Nrn. 1 bis 6 AsylVfG werden Fallgruppen für offensichtlich unbegründete Asylanträge festgelegt, die in einem verkürzten und beschleunigten Asylverfahren abgelehnt werden können.

Ein Asylantrag ist u. a. als offensichtlich unbegründet abzulehnen, wenn

- das Vorbringen des Ausländers in wesentlichen Punkten nicht substantiiert oder in sich widersprüchlich ist oder auf gefälschte oder verfälschte Beweismittel gestützt wird,

- der Ausländer im Asylverfahren über seine Identität oder Staatsangehörigkeit täuscht oder diese Angaben verweigert,
- der Asylbewerber Mitwirkungspflichten im Asylverfahren gröblich verletzt, es sei denn, er hat dies nicht zu vertreten.

Die Anträge werden in einem verkürzten und beschleunigten Asylverfahren behandelt:

Wird der Asylantrag des Ausländers vom Bundesamt für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 als offensichtlich unbegründet abgelehnt, so erläßt das Bundesamt eine Abschiebungsandrohung; die Ausreisefrist beträgt eine Woche. Dagegen kann der Ausländer binnen einer Woche beim Verwaltungsgericht vorläufigen Rechtsschutz beantragen, über den in der Regel binnen einer Woche entschieden werden soll. Das Verwaltungsgericht darf im Rahmen des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s die Abschiebung nur dann aussetzen, wenn ernsthafte Zweifel an der Rechtmäßigkeit der Entscheidung bestehen.

Die in § 30 AsylVfG genannten Fallgruppen entsprechen im wesentlichen den Kriterien, die von den für Einwanderungsfragen zuständigen Ministern der EG am 30. November/1. Dezember 1992 in ihrer Entscheidung zu „offensichtlich unbegründeten Asylanträgen“ aufgestellt wurden.

4. Flughafenregelung

Für Ausländer aus sicheren Herkunftsstaaten, die über einen Flughafen einreisen und bei der Grenzbehörde um Asyl nachsuchen, ist nach § 18 a AsylVfG das Asylverfahren vor der Einreise durchzuführen, soweit die Unterbringung auf dem Flughafengelände während des Verfahrens möglich ist. Das gleiche gilt für Ausländer, die bei der Grenzbehörde auf einem Flughafen um Asyl nachsuchen und sich dabei nicht mit einem gültigen Paß oder Paßersatz ausweisen. Für die Dauer des Asylverfahrens darf der Ausländer den Transitbereich nicht verlassen.

Gegen die ablehnende Entscheidung des Bundesamtes für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Flüchtlinge kann der Ausländer vorläufigen Rechtsschutz innerhalb von drei Tagen nach Zustellung der Entscheidung beantragen. Das Verwaltungsgericht soll innerhalb von 14 Tagen über diesen Antrag entscheiden. Ergeht innerhalb dieses Zeitraums keine Entscheidung, ist dem Ausländer die Einreise zu gestatten. Dies gilt auch, wenn das Bundesamt der Grenzbehörde mitteilt, daß es nicht kurzfristig entscheiden kann oder das Bundesamt nicht innerhalb von zwei Tagen nach Stellung des Asylantrags über diesen entschieden hat.

5. Umsetzung der Übereinkommen von Dublin und Schengen

Weitere Neuregelungen im Asylverfahrensgesetz setzen die asylrechtlichen Zuständigkeitsregelungen der Übereinkommen von Schengen und Dublin um.

So wird z. B. die Drittstaatenregelung dann nicht angewandt, wen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grund eines völkerrechtlichen Vertrages mit dem sicheren Drittland für die Durchführung eines Asylverfahrens zuständig ist (§ 26a Abs. 1 Satz 2 Nr. 2 AsylVfG).

6. Kriegs- und Bürgerkriegsflüchtlinge

Für Kriegs- und Bürgerkriegsflüchtlinge wurde in § 32a Ausländergesetz eine spezielle Aufnahmeregelung geschaffen. Ausländern aus Kriegs- und Bürgerkriegsgebieten wird eine vorübergehende Aufnahme gewährt. Für die Dauer der Aufnahme ist ein Asylverfahren ausgeschlossen.

III. Gesetz zur Neuregelung der Leistungen an Asylbewerber

Mit dem Gesetz zur Neuregelung der Leistungen an Asylbewerber wurden eigenständige Regelungen für diesen Personenkreis geschaffen. Bislang erfolgte die Sicherstellung des Lebensunterhalts von Asylbewerbern nach § 120 des Bundessozialhilfegesetzes.

In dem Asylbewerberleistungsgesetz wird die Sicherstellung des Lebensunterhalts für Asylbewerber den speziellen Bedürfnissen dieser Personengruppe angepaßt. Die Leistungen sollen grundsätzlich als Sachleistungen erfolgen. Die Hilfen wurden gegenüber den bisher geltenden Sätzen gekürzt.

IV.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Zusammenarbeit hinsichtlich der Auswirkungen von Wanderungsbewegungen

Ziel der Bundesregierung ist es, einseitige, unverhältnismäßige Belastungen der östlichen Nachbarstaaten durch die gegenwärtigen Wanderungsbewegungen, insbesondere aus Osteuropa, zu vermeiden. Im Vorgriff auf eine von der Bundesregierung angestrebte europäische Lastenteilung hat sie am 7. Mai 1993 mit der Republik Polen ein Abkommen über die Zusammenarbeit hinsichtlich der Auswirkungen von Wanderungsbewegungen unterzeichnet.

Zum wesentlichen Inhalt:

- Die Republik Polen bekennt sich zu ihren Verpflichtungen aus dem Schengener Rückübernahmeabkommen von 1991.

Dies wird insbesondere dadurch deutlich, daß Asylbewerber bis zu einer Frist von 6 Monaten, nachdem die Behörden Kenntnis von der Einreise oder vom Aufenthalt erlangt haben, rücküberstellt werden können. Um eine Überforderung der Republik Polen durch die Rückübernahmeverpflichtungen zu vermeiden, werden keine Personen rücküberstellt, die vor dem Inkrafttreten des neuen deutschen Asylrechts über Polen nach Deutschland eingereist sind und einen Asylantrag gestellt haben (Artikel 1).

- Im Abkommen ist ferner eine Finanzhilfe für die Republik Polen vereinbart (vgl. Artikel 2 bis 4). Sie beläuft sich für die Jahre 1993 und 1994 auf eine Gesamtsumme von 120 Mio. DM. Diese Finanzhilfen dienen der Realisierung des vereinbarten Maßnahmeprogramms, das insbesondere drei Bereiche umfaßt:

1. Schaffung einer Flüchtlings- und Asylinfrastruktur, d. h. Schaffung von Aufnahmeeinrichtungen, Personalschulung, Ausstattung mit Transportmitteln, Kommunikations-, Datenverarbeitungs- und Bürotechnik.
2. Verstärkung des Grenzschutzes der Republik Polen, d. h. erforderliche Baumaßnahmen, Kauf von Transportmitteln, Modernisierung des Kommunikationssystems, Maßnahmen zur Vermeidung illegaler Zuwanderung und zur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Grenzriminalität.
3. Verstärkung des Schutzes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d. h. Ausrüstung der Polizei mit zusätzlichen Mitteln für Transport, Kommunikation und Datenverarbeitung, Rückführung von Ausländern in die Herkunfts- oder Transitländer.

- Außerdem sieht das Abkommen vor, daß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außergewöhnlichen Ereignissen, die zu einem sprunghaften oder massiven Zustrom von Zuwanderern auf das Gebiet der Republik Polen führen, bestimmten Gruppen dieser Personen die Einreise gestattet (Artikel 6). Auch hierdurch soll eine Überforderung der Republik Polen vermieden werden.

Nummer 212

Stand: 31. August 1993

Betr.: Deutsche Beteiligung an friedenserhaltenden Maßnahmen (FEM) der Vereinten Nationen (VN)

1. Neben erheblichen finanziellen Beiträgen hat Deutschland schon in den Jahren 1973/74 und 1978 direkte Unterstützung für FEM geleistet, in dem sie den VN Gerät überließ und für sie Transportleistungen erbrachte (UNEF II, UNIFIL). Erstmals bei der VN-Mission

- in Namibia (UNTAG) 1988/89 haben wir uns mit Personal (50 BGS-Beamte, 10 Daktyloskopen des BKA und der Landeskriminalämter, daneben Kraft- und Nutzfahrzeuge im Werte von 5 Mio. DM) beteiligt.

Fortgesetzt wurde unser Engagement bei weiteren FEM:

- Nicaragua: In der Wahlbeobachtergruppe waren sechs deutsche Wahlbeobachter vertreten.
 - Haiti: Hier beteiligten wir uns an ONUVEH mit vier Wahlbeobachtern.
 - Zentralamerika: Die medizinische Versorgung von ONUCA haben wir durch die Entsendung von 10 Ärzten und Krankenpflegern/-schwestern unterstützt.
 - Kambodscha: Wir haben uns mit 15 Ärzten und Sanitätern an der Vorausmission der VN (UNAMIC) beteiligt.
 - Angola: An UNAVEM II waren wir mit 10 Wahlbeobachtern beteiligt.
2. An gegenwärtig andauernden FEM sind wir wie folgt beteiligt:

- Westsahara: Das Bundeskabinett hatte am 14. August 1991 der Bitte des VN-GS zugestimmt, 15 BGS-Beamte zur Überwachung des Referendums in der Westsahara im Rahmen von MINURSO einzusetzen. Der VN-GS will nun die Mission durchführen. Zu diesem Zweck sind die ersten vier BGS-Beamte seit 4. Juni 1993 in das Konfliktgebiet entsandt worden. Leiter der gesamten MINURSO-Polizeikomponente ist ein Beamter des BGS (POR Reimann).
- Kambodscha: Derzeit sind knapp 150 Ärzte, Sanitätssoldaten und Zivilpersonal für ein Feldlazarett zur Unterstützung von UNTAC tätig. Unter anderem stellen wir den Leiter der gesamten medizinischen Komponente UNTACs. Das deutsche Kontingent soll bis Mitte November 1993 in Kambodscha bleiben.

Seit Mitte Mai 1992 waren 76 BGS-Beamte als Polizeimonitoren in Kambodscha stationiert, einschl. eines leitenden Polizeidirektors als Chef

des Stabes von UNTAC-CIVPOL. Der Abzug der deutschen BGS-Beamten aus Kambodscha ist angesichts des bevorstehenden Abschlusses der VN-Mission inzwischen erfolgt.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Wahlen Ende Mai 1993 waren UNTAC 41 deutsche Wahlleiter sowie fünf Fingerabdruckexperten zur Verfügung gestellt worden.

- Jugoslawien: Bei den Unterstützungsmaßnahmen der WEU und der NATO im Auftrag der VN zur Überwachung des gegen Serbien/Montenegro verhängten Wirtschaftsembargos sind Angehörige der BW beteiligt.

Bei UNPROFOR im ehem. Jugoslawien ist deutsches Personal nicht beteiligt. UNPROFOR unterstützen wir durch die leihweise Überlassung von Material und Ausrüstung (Lkw, Generatoren u. ä.) aus ehemaligen NVA-Beständen.

- Irak: Ständig sind ca. 40 Spezialisten der Bundeswehr für Verifikation und Abrüstung für die Abrüstungskommission Irak (UNSCOM) tätig.
- Somalia: Das Bundeskabinett hat am 21. April 1993 beschlossen, zur Unterstützung von UNOSOM innerhalb befriedeter Regionen ein verstärktes Nachschub-/Transportbataillon zu entsenden. Der Bundestag hat am 2. Juli 1993, wie im Urteil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23. Juni 1993 verlangt, der Beteiligung von BW-Soldaten an UNOSOM II zugestimmt. Inzwischen sind alle deutschen Soldaten (rund 1 700) in Somalia disloziert.
- Georgien: Die VN haben uns informell um personelle Beteiligung an UNOMIG mit Militärbeobachtern gebeten. Wir sind grundsätzlich bereit, der Bitte vorbehaltlich der Unterrichtung des Kabinetts zu entsprechen.

Wir haben den VN ferner angeboten, einzelne Experten (Logistik-Experten der BW; Personal des BGS) in das VN-Sekretariat (Peace-keeping Department, Field Operations Division) zu entsenden, um bei der Planung und Durchführung von FEM mitzuwirken.

3. Die Kosten für VN-Friedenstruppen werden als Pflichtbeiträge auf die Mitgliedstaaten der VN umgelegt. Mit dem zunehmenden Einsatz von Friedenstruppen sind daher zusätzlich zum eigentlichen VN-Beitrag immer größere finanzielle Belastungen auf uns zugekommen, die sich wie folgt verteilen:

Beitrag zum regulären VN-Haushalt (8,93%)

im Jahr 1992: 87,5 Mio. US-\$ (= ca. 139 Mio. DM)

im Jahr 1993: 91,1 Mio. US-\$ (= 148,6 Mio. DM)

Pflichtbeiträge für FEM

im Jahr 1992: 140,3 Mio. US-\$ (= 216,1 Mio. DM)

im Jahr 1993
(geschätzt): 192,2 Mio. US-\$ (= 323,4 Mio. DM)

독일 통일백서

인 刷 : 1994. 10. 8

發 行 : 1994. 10. 10

發 行 處 : 統一院 統一政策室

第 2 政策官室

Tel : 720-2148

725-0762

〈비매품〉

